제429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2025년9월25일(목) 오후 3시 30분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9월25일 개의하여 9월29일 산회하였음]

의사일정

1.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96)
2.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5)
3.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국방·정보·여성가족위원장 제출)
4.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3)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장 제출)
6.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2895)
7.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29)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7)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6)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8)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7)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5)(추가)

상정된 안건

1.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96) ····· 4
2.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5) ····· 5
3.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국방·정보·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5
4.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3) ····· 6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6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신장식 의원 등 178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79) ····· 7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0) ····· 7
o 의사진행발언 ····· 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1) ····· 10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2) ····· 11
o 의사진행발언 ····· 11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신장식 의원 등 178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79) ····· 14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0) ····· 1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1) ····· 14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2) ····· 14
6.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2895) ····· 21
7.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29) ····· 23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7) ····· 24
- 무제한토론 의원(박수민) ····· 26
- 무제한토론 의원(서영교) ····· 235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 313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7) ····· 314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6) ····· 314
- 무제한토론 의원(최형두) ····· 315
- 무제한토론 의원(이주희) ····· 446
- 무제한토론 의원(김장겸) ····· 526
- 무제한토론 의원(황정아) ····· 602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 608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6) ····· 609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8) ····· 609
- 무제한토론 의원(유상범) ····· 610
- 무제한토론 의원(채현일) ····· 668
- 무제한토론 의원(강선영) ····· 688
- 무제한토론 의원(김준혁) ····· 728
- 무제한토론 의원(박충권) ····· 773
- 무제한토론 의원(김남근) ····· 819
- 무제한토론 의원(이종욱) ····· 856
- 무제한토론 의원(안태준) ····· 880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 903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8) ····· 904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7) ····· 904
- 무제한토론 의원(김은혜) ····· 905
- 무제한토론 의원(문금주) ····· 1044
- 무제한토론 의원(박성훈) ····· 1078
- 무제한토론 의원(박홍배) ····· 1116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 1136
- 무제한토론 의원(전진숙) ····· 1160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 1169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7) ····· 1170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370) ····· 1171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5) ····· 1172

(15시39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석에 국민들이 많이 오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실 소개로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한꺼번에 인사하시지요.

임미애 의원실 소개로 경북 청송·영덕산불대책위원회 피해 주민들 오셨고요. 전재수 의원실 소개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 오셨고, 고민정 의원실 소개로 서울 광진구을 청년위원회 회원들 오셨습니다. 박주민 의원실 소개로 문신사 단체 여러분 오셨고 그리고 단체 방청으로 합천가야초등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96)

(15시4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장대리 정일영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정일영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중대한 계기라는 인식 아래 대한민국국회가 정부, 지자체, 국민과 함께 협력하여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민 삶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연결·혁신·번영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다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여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시켜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며 K-컬처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임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의 의미를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정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은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의 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5)

(15시44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허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허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허영 위원입니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년 10월 31일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상황과 내용을 점검하고,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청취와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초대형 산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허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국방·정보·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5시4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 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4.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3)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국회운영·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1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상혁 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박상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39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1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진석·신장식 의원 등 178인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각각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의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들 동의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신장식 의원 등 178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79)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0)

(15시52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먼저 강준현 의원 나오셔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중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되는 침해행위가 매우 협소하여 그 제한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취지에 따라 2건의 중요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강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진행발언

(15시54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이 안건들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속안건처리제도는 국회가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 간 갈등으로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사용하는 제도이지 다수당의 입법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점과 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저희 정무위 소속 법률안입니다. 그렇지만 이 민주유공자 제정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모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단 한 번도 회부돼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토론 절차도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생략된 채로 민주당 주도로 오늘 기습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여야 협의와 국민 토론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되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서슴없이 폭주를 자행한다면 국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입법부의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의국회장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유공자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 관련자가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토론과 숙고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제재 수단을 강하게 마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포괄적 제도 도입은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너무 성급한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에 고위공직자나 안보 사안이 정치적 공방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안 발의에 동의를 하셨는데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사법적 심사가 되기 전에 행정기관의 준사법적 권한이 비대화되게 되면 결국 사후 사법심사 단계에서 권력 견제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토론 한 번 있었으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앉아 계실 겁니다. 저희 정무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토론을 하면서 절차를 거쳤고 서로가 양보하면서 정말로 모범적인 상임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패스트트랙 남용은 여러분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기능을 여러분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의 요체는 관용과 절제인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남의 얘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조그마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속도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는 속도가 아니라 과정과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절차를 짓밟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졸속입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린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 한 번은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유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입니까? 공익신고가 무엇입니까? 내란·외환의 죄가 공익침해행위 맞습니까? 내란·외환의 죄를 신고하는 것이 공익신고 맞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익신고가 맞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공익침해행위를,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 행위만을 공익신고라고 해 놨습니다. 열거주의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포괄주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공익신고자의 희생 위에 공공의 정의와 헌정질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익집단이나 권력형 범죄, 초법적 행위로부터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괄주의로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독립과 호국과 민주, 3개의 삼발이 안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3개 다 균형 잡히게 골고루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주를 그렇게 홀대합니까?

민주유공자법이 1964년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운동에서 사망·행방불명·상이 이렇게 된 분들부터 시작해서 단 829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판합니다. 민주당의 셀프입법이라고 합니다. 이 829명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셀프입법입니까?

음서제도라고 비판합니다. 음서제도가 뭡니까? 고려시대에 벼슬아치의 자식들에게 벼슬을 주는 것 아닙니까? 민주유공자 자식들에게 취직에 가산점을 줍니까, 학교 들어가는데 이점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의료, 양로, 요양, 재가복지 이 정도를 인도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도 과도한 범죄나 품위 손상이 일어나면 이 예우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리고 그 형법 위반자는 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신청 후에도 보훈부 산하 심사위원회 재심의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도 똑같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은 16대 국회에서 시작해서 20대 때 갔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은 상당수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 보호법은 과거를 보상하는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미래를 지키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역사의 증언자들을 잃어버리도록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16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도 숱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법안소위 열어 주셨습니까? 법안소위를 열어야 논의 절차를 할 것 아닙니까. 법안소위를 열지 않으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6개월 지나면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하고 싶으시면 6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6개월 동안 조금 전의 쟁점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합시다.

○의장 우원식 민병덕 의원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장내 소란)

아니,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그러지? 여야를 막론하고 잘했을 때 잘한다고 얘기 가끔 한다고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1)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의안번호 2213282)

(16시05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되는 후속 법률안 2건,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공공기관 운영 관련 권한을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해서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민간위원 확대, 사무기구 설치 등을 통해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추어서 기존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내란으로 인해 추락한 대한민국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왔으며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마저 무제한토론을 예고하는 등 국정 발목 잡기에 매진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법안 논의를 생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의 기간을 정함으로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취지에 따라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정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진행발언

(16시08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이 안건들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무너뜨리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수법안 2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통계법 개정안은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총리실 산하로 옮기면서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인 공동위원장의 행정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 통계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때 102번이나 집값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던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또한 단순한 민관 공동 운영이 아닌 부적절한 낙하산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지난 9월 16일에 발의되어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법안의 검토보고서나 단 한 번의 토론조차 없었습니다. 상임위는커녕 여야 간사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분리 개편안과 함께 세부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여당은 숙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잘못 디뎠다가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OECD가 23일 발표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1.0%로 멈췄습니다. OECD는 전 세계 경제가 3.2% 성장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성장률을 우리보다 높게 전망했습니다.

기업이 활력을 갖고 성장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수도 넉넉해지며 나라 살림이 부흥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역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현금 살포와 재정 폭주 탓에 나라 빚은 내년에 1415조 원에 달합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51.6%에 이르고 2065년에는 173%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기재부 예산 기능을 떼어 내 국무총리실 아래로 두겠다고 합니다. 나라 빚만 1000조 원으로 폭증시킨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을 견제한 기재부를 쪼개서 대통령실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겠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 장기화로 피눈물을 흘리는 기업들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6% 넘게 폭락했습니다. 자동차는 9.5%, 가전제품은 무려 20% 하락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야당을 따돌리고 독재 정부처럼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나 임기 초에 정부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이토록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라도 야당과 협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켜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독재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박수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입은 바른 소리 하라고 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난 3년간 우리 경제 평가를 한번 해 보시지요. 23년도 1.4%, 24년도 2.0%, 25년도 1%.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0.8%가 1%까지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2% 미만으로 성장한 게 대한민국에 딱 네 번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2% 이하로 3년 연속 저성장한 것입니다.

재정 파탄 누가 냈습니까? 23년도 56.4조 세수 펑크 내지 않았습니까? 24년도 30.8조 세수 펑크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5년도, 간신히 추경 해서 10조 정도 세입경정했습니다. 세입을 경정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수 펑크, 재정 펑크는 윤석열 정부가 낸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이재명 정부에 돌려치기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운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왕고래 프로젝트 들어 보셨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거대한 실패작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와 도로공사 같이 개입해서 양평고속도로 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뭡니까? 국민들 세금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 바로잡자는 게 공운법 아닙니까?

공운법은 전문성, 대표성 그리고 각 부처의 특별한 역할들 강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이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이 있어야 일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만 같습니다. 성공은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통계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는 AI 시대의 근간입니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정책 설계하는 기능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AI 시대에 이 데이터가 강화돼야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통계청은 그간 기재부 소속하에 특별한 수요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라는 것이 공공과 민간, 특히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 환경, 기후, 인구, 민간과 공공이 각각 연결되고 중첩된 데이터가 생산돼야 될 역할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로 두고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시켜서 총괄 조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같이 함께 논의하시자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속처리안건 동의의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회의 방청석에 새로운 손님들이 오셔서요 좀 소개하겠습니다.
부산교대부설초등학교 학생들, 많은 학생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신장식 의원 등 178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79)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1)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2)

(16시17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이들 동의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곽상언 의원, 김기표 의원, 김성회 의원, 이용우 의원, 김건 의원, 김소희 의원, 김용태 의원, 임종득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19분 투표개시)

(「의장님, 언제 끝내요?」 하는 의원 있음)
(「언제까지 끝내실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했잖아요. 빨리 끝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조용히 해 달라며」 하는 의원 있음)
(「그쪽에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안 온 사람 있지, 안 온 사람」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예의를 지킵시다.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5분의 3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투표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다려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할 사람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의장! 빨리 끝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어차피 무제한토론할 건데 뭘 빨리하자고……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지 말든가! 어차피 4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의원 있음)
(「빨리 투표 종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신속 처리하세요, 신속 처리」 하는 의원 있음)
(「사무처,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아니, 거기 기다려 달라고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보고받기로는 한 사람이 안 와서 기다려 달라고 얘기해 놓고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 소란)

좀 서로 소통을 하세요. 여기다가는 내가 누구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안 와서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4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서로 소통을 좀 하세요, 지도부한테.

명패수는 27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하고 그러는 데 의장이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양당에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뒤에 명패가 다섯 분이 남아 있어서 그중에 한 분은 오시겠다고 해서 5분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데……

양쪽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의장한테 마치 일부러 종료를 안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얼른 그 안에서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알게 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투표수는 27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투표수가 275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더 많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더라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계표를 진행하여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의장님. 이러니까 부정 정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1매가 왜 더 많은지 국회의장으로서도 여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면 부정투표겠지요. 아마 한 장씩 나눠 주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두 장을 나눠 준 것을 투표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국회법에도 표결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재투표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투표하지 않으면 부정투표라고 생각하시면 재투표하지요,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할까요?

(장내 소란)

잠깐만요. 이게 문제는 부정투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의심을 가지고 부정투표라고 얘기하면 그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런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여당 원내대표께서 재투표하자고 하시는데 재투표하는 게 좋겠습니까?

(장내 소란)

잠깐 나와 보세요. 양당 수석, 원내대표 나오세요.

(「의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을 의혹만 가지고서 번복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요.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결정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부정투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여서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요. 국회법 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의 3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법에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투표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표를 해 봐야지.

(◯송언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요. 의장님,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는 한 표가 아니라 두 표 차이라니까요.)

두 표가 아니고 한 표예요.

(◯송언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두 표지요. 두 장을 누군가 가져갔잖아요, 두 장을.)

아니, 그러니까 한 표지.

(◯송언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정투표를 한 거예요.)

(◯허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정투표가 아니지요, 그것은.)

(◯송언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어쨌든 두 표는 누가 찍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표를 빼면 되는 거지.

(◯송언석 의원 단하에서 — 가인지 부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무슨 부정투표입니까?

(「그게 무슨 부정선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잠깐만. 이게 나눠 주는 분이 잘못 준 것 아닙니까, 자기가 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눠 주는 분이 잘못 두 장을 준 건데.

(◯송언석 의원 단하에서 — 잘못 나눠 줬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이것은 국회의장이 여기서 충분히 얘기했는데 상식적인 판단과 법이 정한 판단에 따라서 법이 정한 바대로 ‘투표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지금 계표를 중단시키고, 지금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한 표를 빼도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단하에서 —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된 투표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114조 3항 가서 읽어 보세요! 법률을 좀 읽어 보시라고요! 뭐가 문제야, 뭐가! 두 표 이상 차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계표하세요.

(장내 소란)

(◯송언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부정을 했어요, 부정을! 어떻게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합니까?)

(◯허영 의원 단하에서 —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송언석 의원 단하에서 —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허영 의원 단하에서 —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이런 국회규칙을 만든 것 아닙니까!)

(◯송언석 의원 단하에서 —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송언석 의원 단하에서 — 김용만 의원!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똑바로 해!)

제가 좀 더 자세한 국회법 해설을 이 부분에 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그 투표는 무효로 재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법 제11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의장은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 일단 계표를 진행하여 집계를 하고 명패수보다 많은 몇 매의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여 재투표를 실시할지 투표를 유효로 할지 결정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단하에서 — 한 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투표의 문제예요, 투표의 문제!)

들어가세요.

(○허영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계표 결과를 보고 결정하신다잖아요!)

(○송언석 의원 단하에서 — 투표의 문제야, 투표의 문제!)

보세요. 여기에 그 문제도 이렇게 정리돼 있어. 잠깐만요. ‘명패수보다 많은 몇 매의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 명패수보다 많은 숫자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한 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표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국회법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해설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송언석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투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정투표야, 부정투표! 부정투표라니까, 이것!)

(장내 소란)

지금 계표 중이니까 계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판단을 맡겨 놓으시고 조용히 계시지요.

계표도 좀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너무 과하게들 얘기하지 마세요. 뭐 표가 왔다 갔다…… 의장이 보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원내대표 불러서 상의를 할 거예요.

원내대표들 나오십시오.

(장내 소란)

거기서 판단을 못 하니까 계속 갈등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국회의장은 의사정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더 시간을 끌면서 고심할 수도 없고 저 두 표에 대해서 의사정리권을 갖고 있는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결국은 정 의심이 가면 국민들한테도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저도 동의하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글이 유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글이어서, 흘려 쓴 글이긴 한데 의사 표현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 글을 쓸 때 우리가 무효로 처리하는 동그라미로 한다거나 점을 찍는

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무효시키는 그런 것도 없고 칸 바깥으로 나간 것도 없고, 흘려 쓰긴 했습니다만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글자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여서 유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 글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시고 국회의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면 또 제기하시면 제가 순순히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고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 글자여서……

그런데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박또박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할 때는 무효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애매모호하지 않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사 표현이 분명한 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결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표 때문에」 하는 의원 있음)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게 애매모호한 글자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한 겁니다.

(장내 소란)

국회의장 하기 참 어렵네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180표, 부 9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275표 중 가 182표, 부 93표입니다.

(「무효!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의 경우 명패수보다 많은 투표수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181표, 부 9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182표, 부 90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180표예요, 처음 게. 그런데 한 사람이 2표를 넣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2표 넣은 거는 민주유공자법이고 지금 180표는 공익법이고.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법은 182표입니다. 그래서 1표나 2표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표 한 것은 민주유공자법이고 그거는 182표가 나왔어요, 가 표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180표니까 문제가 없고.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아까 나온 게 뭐였지요?)

그거는 공익,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것은 '가'로 보는 게 맞아요.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아니지요. 그것 해독이 어려우면……)

제가 그렇게 판단한 거니까, 그리고 수석께서도……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그게 잘못되면 부결 아닙니까, 두 장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아무리 봐도 그것은 유효표로 보니까.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세요? 해독이 불가능하면…… 기억나시지요, 의장님? 옛날에 '부' 자를 '우' 자 같다 그래서 무효표 만든 것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해독이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때 해독 불가능하지 않았는데도 해독이 어렵다 우겨서 무효표 만드셨잖아요, 그때도. 이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만희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잖아요.)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그렇게 보셔야지요, 의장님. 그러면 그게 부결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장내 소란)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서로 간에 의견이 갈렸으면 해독 불가능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효가 돼야지요. 그거를 180석으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상혁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해독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박상혁 의원 단하에서 — 들어가세요.)

(「무효,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양쪽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도 결정이 안 났고, 방금 여기서 결정이 안 났고 그런데 여기서……)

(○박상혁 의원 단하에서 — 지휘권을 가진 의장님이 지휘하셨잖아요. 들어가 주세요, 유상범 의원님.)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패스트트랙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박상혁 의원 단하에서 — 뭐가 정상이 아니에요?)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표가 안 맞잖아요.)

(○박상혁 의원 단하에서 — 뭐가 정상이 아니에요, 뭐가?)

(○허영 의원 단하에서 — 결과가 '부' 자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더구나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법이 아니고 공익법이에요, 그러니까.

(○박상혁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들어가세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떼쓰지 마세요.)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패스트트랙이 정상입니까? 패스트트랙이 정상이에요?)

(○박상혁 의원 단하에서 —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이거는……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이게 181석만 돼도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180석이었는데, 180표인데 그 두 표에 대해서 양 진영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 해석

이 안 된다 그래서 무효로 갔어야지요.)

(○박상혁 의원 단하에서 — 왜 이게 무효예요? 표결 해석권은 의장님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세요. 결정했으니까 이것을 항의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애초부터 문제가 많아요.)

(○박상혁 의원 단하에서 — 뭐가 문제가 많아요? 정당한 법이에요.)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뭐가 정당해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박상혁 의원 단하에서 — 패스트트랙이 뭐가 문제예요?)

(장내 소란)

뭐가? 민주유공자법? 아니, 민주유공자법은 182표입니다.

이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장내 소란)

(○송석준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반성하세요.)

(○유상범 의원 단하에서 —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양쪽이 다 다른데.)

---

6.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2895)

(18시09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6항 문신사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수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7건의 법안 중에 오늘 한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서만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26건의 민생 입법, 여야 합의 법안들을 함께 설명 못 드려 매우 아쉽습니다. 속히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상임위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신사법(대안)은 윤상현 의원, 강선우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하고 문신,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으로 구분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 및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는 금지하고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건강진단, 문신 부작용 설명 및 신고, 문신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주민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문신사법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 면허 신설 등을 통해 허용하고 제도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등 동 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동 법안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문신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무면허자의 문신행위 등을 금지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짧게 하라는 눈빛이 강력한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변호사 시절부터 이 법 통과를 위해서 매달린 시간이 무려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짧게 몇 가지 말씀 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 대략 1300만 명 정도에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략 3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미 문신은 일반화되어 있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눈썹 문신이나 입술 문신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불법이었고 법의 사각지대하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오늘 문신사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면서 안전하게 국민분들은 문신을 받으실 수 있고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합법적인 존재로서,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사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기권 7인으로서 문신사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문신사법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29)

(18시15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7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임미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 나와야지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정재 의원님,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김태선·박형수·임미애·이만희·이달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어 다른 법률에서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 등이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등을 수행하여 피해주민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해서 정책사업 및 산림소득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지역을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피해주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이 법안의 통과가 조금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신 거예요? 저기 안 한 겁니까? 손을 드셔야지.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장내 소란)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것 지금 결과 발표하는데 왜 소리 지릅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 뒤에 기다리시잖아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피해주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법안으로 해서 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기원하고 국회에서도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7)

(18시2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신정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병기·강준현·구자근·김소희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여 기존 산업통상부 소관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산 수행하고 있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무

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각각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정책 집행의 효율적·체계적 대응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강화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홉째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 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 회복과 국가 혁신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 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무너진 민생과 산적한 국정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문진석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출신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 아시겠지만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법률이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미처리됨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감위 개편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무제한토론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고 있는데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외치신 해당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수정안만이라도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 아닌 상태에서 처리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

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표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짚어 둘 말이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입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또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을 무소속의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의사정리 직무의 회피나 거부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 운영의 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단의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수민)

(18시29분)

○의장 우원식 먼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의원 제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 10분만 듣고 가십시오.

나가지 마세요. 제가 한 10분 정도 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입니다. 개포동·일원동·세곡동·자곡동·율현동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1년여 만에 다시 무제한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

회의원 무제한토론입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성찰과 사과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정권을 잃었습니다. 국정을 이어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개혁과제들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가장 직접적 원인이었던 계엄을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엄 후 정국을 관리해 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찰의 결과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견제와 대안이라는 소명의 길을 잘 걷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금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수목불치, 수단과 목적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불러 봅니다. 또한 주마급류, 달리는 말 위에서 물을 보는 듯합니다. 보수는 수구로 망하고 진보는 급진으로 망한다, 지난 1년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수민 의원님, 잠시만 제가 공지 하나 하고요.

○박수민 의원 예.

○부의장 이학영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8시 30분에 문진석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의원 제가 작년 1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 보니 어떤 진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류에 빠지고 또 그것을 고쳐 가야 합니다. 진보는 급진을 경계해야 됩니다. 과격하고 너무 급합니다. 사회를 실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그 혼란과 비극의 교훈이, 지금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필리버스터 한다 그래서 발목 잡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왜 발목 잡기가 될 수 없는지 제가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했었고 모든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딱 세 가지 아주 간소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신설, 국가보훈부의 승격 그리고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폐지 쟁점이 있어서 그것은 여야 합의로 추진을 안 했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승격 이 2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넉 달입니다.

금번 민주당이 주도하시는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입니다. 지금 얼마 만에 통과 시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열흘입니다. 넉 달 대 열흘, 저는 이 산수부터 말씀드립니다. 발목을 잡고 싶어도 잡을 틈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상정하시고 하루 만에 소위 통과하시고 또 전체회의 통과하시고 바로 본회의

로 직상정하십니다. 이거 뭐, 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처럼 달리고 계십니다. 보수는 수구를 조심하고 진보는 급진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을 밤새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13개 항목은 대표적인 게 검찰청의 폐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 등등 상당히 첨예하고 내용이 큽니다. 그런데 달랑 열흘입니다. 발목 잡기 프레임은 좀 잘못 짜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 토론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셨는데, 저와 가깝게 활동했던 기재위 김영환 위원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기획예산처가 탄생하는데 토론해 보셨나요? 답을 들을 수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실이 빠져나가서 기후에너지부가 됩니다. 그러면 산중위 위원님들은 토론하셨습니까, 이것?

지금 국민들은 상임위에서 토론 한 번 없이 대한민국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있다, 이걸 아시고 계실까요? 그런데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다면 무제한토론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임위 토론이 없는데 무제한토론도 안 한다, 저희는 그런 도리 없는 일은 못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도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가위에서는 토론이 있었나요? 과방위에서는 토론이 있었습니까? 상임위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지금 열흘 만에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발목을 잡았다는 것인지 제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흘 만에 나라의 근본 조직을 흔들다 보니 이게 보이는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목수불치,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7개 문제점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입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안 계셔서 제가 좀 아쉬운데 제가 여기서 선명히 외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검찰개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기관 간의 핑퐁 문제가 심각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지요. 그런데 이 문제도 같이 고쳐야지요. 이 문제는 고치지 않고 검찰만 개혁한다? 저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입니다.

저는 흡사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폭력을 휘두릅니다. 피해는 가족들이 받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주장하시면서 방법을 택하는데 그 피해는 이미 민생수사 지연이라는 결과로 국민들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 감고 계속 더 강한 검수완박을 휘두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즉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이미 2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수사는 5년이 가도 진행이 안 된다, 어떤 수사는 2년이 돼도 진행이 안 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아우성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검찰개혁에 동의하기 때문에 잡다한 얘기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이미 실현된 피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은 놀라웠습니다. '1년 동안 시행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사이에 답을 가져오겠다',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낍니다. 준비되지 않은 검찰개혁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신구폐, 먼저 신조직을 만들고 구조직을 폐해야 합니다. 이사 갈 집을 정해 놓아야 기존의 집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간 아무 대책 없이 일단 검찰청만 폐지한다고 합니다.

선신구폐, 이 원칙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300명의 검사 있습니다. 1만 1000명의 수사관 있으십니다. 이들은 향후에 어디로 가실까요? 지금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1년간의 시행기간 동안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진보는 급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1만 1000명의 수사관과 2300명의 검사는 어떤 생각 속에 있겠습니까. 성심을 다해서 문 닫을 기관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서는 구직활동에 나서겠습니까? 이것은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 핑퐁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1년간의 사법 공백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외쳐 드립니다. 검찰개혁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면 하시지요.

검찰과 민주당의 악연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피해 입은 것 치면 저희 국민의힘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만큼 대한민국에서 고쳐야 할 우선순위 높은 과제도 적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치를 복원하는 첫 번째는 정치의 검찰화, 정치의 사법화를 끊어 내야 하고 사법과 검찰의 정치화도 끊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한 핑퐁의 문제는 이미 불거졌고 더 커질 것이고 1년간의 사법 공백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른 문제 하나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법에 보면 가정법원이 지정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 하면 미성년자든 약간 장애가 있는 분이든 친족이 나서서 이분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할 때 가정법원이 나서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서지 않는다든지 안 계신다든지 조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후견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지정해 주는 제도인데 그 후견인 지정을 누가 요청하느냐. 검사가 요청하게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급히 하시느라고 이 문제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검사가 사라지면 이 후견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검수완박이 돼도 이것은 작동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살펴봤다는 답변과 흔적은 어디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경찰청 경찰 말고 국세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등에 특별사법경찰이 계십니다.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2만 명이 넘으십니다. 이 2만 명의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으십니다. 검사

의 수사 지휘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이 2만 명의 특사경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로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을 이렇게 하시면서 바뀌는 부칙이 무려 627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수청이 생기고 또 재정경제부가 생기고 등등 하면 기존 법에 기획재정부·검찰청, 검찰총장·재정경제부장관을 인용해 놓은 법조항들이 많을 텐데, 그 조항이 무려 627개입니다. 명칭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부칙에서 그냥 살짝살짝 이름을 다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전할까요?

이름이 바뀌었을 때 법안의 문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이름이 들어가야 할지 매우 첨예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부처를 두 개로 쪼갤 때, 즉 기존에 기획재정부장관일 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뉠 때, 기존에 검찰청 하나였을 때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뉠 때 기존에 검찰총장으로 들어가 있는 법조문에 공소청장을 넣어야 합니까, 중수청장을 넣어야 합니까? 이런 것 다 논의된 겁니까? 무려 627개입니다.

오늘 본회의까지 단 열흘 걸렸습니다. 상임위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전 상임위가 일주일 동안 검토해도 하루에 법조문 100개씩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임위도 토론을 안 했습니다. 산중위 안 했습니다. 기재위 안 했습니다. 환노위 안 했습니다. 행안위, 제가 행안위 소속인데 행안위 이것 토론할 시간도 없이 끝났습니다.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당입니다. 무려 170여 석의 권력. 아니, 국회 내에서 190여 석을 지휘하고 계신 절대 여당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뭐가 이렇게 급하게 법안 바꾸십니까?

국민의힘,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걸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을 듣지 않고 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냐는 프레임을 들고나오셨습니까?

혹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높으신 분들일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모를 겁니다.

추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민주당에서 공언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작에 열심히 하지 그러셨습니까. 너무 서둘러 하다 보니 금융조직에서는 결국 무리가 가서 방금 전 몇 시간 전에 그 안건을 철회했습니다. 조금 더 살피지 그러셨습니까. 금번에 처리할 게 있고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닙니다.

반대만 하고 대안을 말 안 한다고 하니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을 해서 기소·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면, 즉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면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전체 사건을 1차로 경찰이 수사하고 전체를 검찰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복원하십시오. 검찰에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맞물려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촉진할 것은 촉진해서 무한 핑퐁의 문제도 없어지고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도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수사지휘권이라는 표현이 상하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찰분들께 안 좋은 느낌을 준다면 보완수사요청권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진행하는 그 권한은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견제되어야만 피해자가 없고 동일하게 핑퐁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그다지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일제시대 때,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고 일제시대에 들어왔을 때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것은 순사였고 또 자유당 시대까지 경찰의 권력이 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헌법적 교훈이 있습니다. 검찰을 믿고 경찰을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해서 1차 수사기관화되고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수사기관 경찰, 거기로 집중되는 문제는 어떻게 견제하시겠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되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고 견제하고 촉진하는 수사지휘권 혹은 보완수사요청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집중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분권적 관점에서 검수완박을 하신다는 점에 제가 동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제와 균형이 아닌 집중과 해체, 이렇게 가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옵니다. 견제와 균형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집중과 해체의 길은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매우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분명히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굳이 공소청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지금 매우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달리시니까 전혀 못 듣고 계십니다. 검찰총장대행도 옥의 티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을 얘기는 들어야 합니다.

방통위 폐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살짝 바꾸고 기능을 살짝 보강해서 바꾸셨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쫓기 위한 법기술입니다. 야, 정말 저는 이 버튼을 누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위인폐관,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폐쇄하고 새로 만든다. 대단한 창의력이라고 해야 될지 법기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간혹 법꾸라지라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법을 잘 공부해서 법망을 피해 나간 사람들을 비난하는 단어인데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통위를 폐지하시는 거는 헌법꾸라지입니다. 헌법을 공부해서 다수당의 입맛대로 정부조직을 폐쇄하고 다시 만드는, 저는 정말 이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진짜 이걸 해 버리시네요. 놀랍기도 하고 참담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민간 위원회인데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번에 바꾸셨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방송 3법을 고쳐서 언론노조와 밀월 관계에 들어가신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서 내리꽂는다,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

까? 땡명 뉴스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무직 공무원을 보내서 뉴스를 검열할 위험을 만든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화근을 만들고 계시는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3법 통과시키셨습니다. 그전에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어서 기능 장애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멈출 줄도 아셔야 합니다. 이미 막강한 권력을 가지셨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야당의 결기는 의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폭주는 폭정을 의미합니다. 독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이시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170여 석에 이르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방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해서 또 임명할 생각, 무슨 생각인지 저희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성을 하려고 해도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과방위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찬성할 수가 없고 반대합니다.

경제부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를 설치합니다, 금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것입니다. 예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획예산처에 근무했었습니다. 예산을 분리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획예산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너무 작았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져서 재정경제원이라는 공룡이 탄생해서 외환위기 때 탄력적인 대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개를 분할할 때 기획예산처가 좀 작게 탄생했고 재정경제부가 좀 크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당시에 너무 작다, 조직이 너무 작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획예산처 새로 만드시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기획예산처,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에 비해서 금번 기획예산처는 더 작았습니다. 그때도 작아서 문제가 됐는데 금번에는 더 작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어떤 논리구조에서 만드신 겁니까? 제가 물어봐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한꺼번에 있어서 문제가 컸기 때문에 분리한다, 제가 그런 얘기는 행안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리해도 작동 가능하게 해야지 하나는 작게, 하나는 크게. 그리고 그것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더 깊게 고착화시키면서 복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뭡니까?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라 빚을 동원한 포퓰리즘, 그것을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를 과거보다도 더 작게 만든 것은 혹시 이러한 포퓰리즘을 쉽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소비쿠폰을 뿌려서 현금성 매표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저희가 맹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만드십시오. 그런데 기획예산처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더 작게 만들어서 쥐락펴락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무기력한 부처를 탄생시켜서 정치권의 입맛대로 쓰고 그 후과는 누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사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정파의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것이고 우리 모두

의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경부도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탄생한 이유,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로 합쳐진 이유는 기획예산처는 너무 작아서 문제고 재정경제부는 예산이 없다 보니 경제 조정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기획재정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예산 기능이 없는 재정경제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작동이 안 됐던 공룡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토론했습니까?

대안을 제시 안 하면 또 반대만 한다 하시니 대안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을 분리하고 경제와 재정 기능을 조화롭게 할 때 저뿐 아니라 모든 경제부처, 경제관료 OB들이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경제기획원의 뉴 버전, 재무부의 뉴 버전,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양 체제가 더 나았다. 차라리 이것을 복구하는 것이 더 낫다.

경제기획원을 복구시키려면 경제정책국, 경제조정국, 예산실, 공공관리국 등이 하나의 부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다시 탄생하려면 세제실, 금융정책국, 국고국 등이 하나의 부처를 만들면 됩니다. 이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즉 현재 두 개인 것을 다시 두 개로 재편성해서 둘 다 크기가 비슷하고 기능도 엇비슷해서 견제와 균형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 혹시 공청회라도 해 보셨습니까? 전직 경제관료들 불러서 토론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교수님들 불러서 토론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이래도 발목 잡기인지 반문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깊은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나라가 잘되려면 기획 기능도 있고 재무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에 CFO도 있지만 CPO(Chief Planning Officer), CSO(Chief Strategy Officer)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를 만들면서 기획재정부지만 과거 재무부 문화가 많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획 기능은 약화됐습니다. 경제기획원이 기획예산처로 바뀌고 기획재정부로 흡수되면서 대한민국의 기획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손의 시대가 아니라 보이는 손의 시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통상협상을 하고 관세협상을 합니다. 국가의 전략 속에서, 상대 국가의 상황 속에서 협상의 전략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면 그게 잘될까요? 이미 꼬여 있는 3500불의 협상이 금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더욱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첨병으로 나서야 하는 게 누굽니까?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외교부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과 뗐다 붙였다 한다 하고…… 입장 바꾸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에 장수를 갈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미 협상은 전쟁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무역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수출이 내수로 전환되지 않아서 저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내수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수출 자체가 약화되면 차원은 한 단계 더 냉각됩니다.

대미 협상의 중요성, 누차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려는 하신 건지요? 3500불 협상은 꼬여 있는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실을 빼서 기후에너지부로 넣고, 공직자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경제관료 OB들과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모델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오늘 금융감독 기능에 대해서 막판에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숙고해 보십시오.

오늘 막판에 철회하셨지만 금융감독체계 문제도 잠복돼 있는 문제니까 같이 지적드리겠습니다.

오늘 철회하신 안건은 금감원을 두 개로 일단 쪼개는 겁니다,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으로. 이게 호주에 하나 사례가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분할입니다.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감독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수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소비자 민원, 피해구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기능으로 굉장히 현장 밀착형의 기능인데 이걸 왜 2개로 쪼갭니까?

특히나 소비자 보호 기능은 B2C, 즉 소비자 민원을 직접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도가 높고 상당히 첨예한 업무입니다. 하나로만 몰아 놓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발전시켜 온 금감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근에 금감원이 하나라서 문제였다는 얘기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지금 이게 혹시 위인설관, 이번에는 금감원장 자리를 2명한테 줘야 되는데 둘 다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금감원을 두 개로 쪼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의 신뢰에 치명상을 줄 일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철회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기후에너지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산자부의 에너지실을 병합시키는 안건입니다.

산자부 에너지실은 전력공급기본계획, 전기본이라 하지요, 전력공급기본계획을 짜는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핵심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쏙 빼서 환경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규제 부처입니다. 에너지실은 에너지를 공급해 온 기관입니다. 규제 부처에다가 공급 기능을 갖다 붙이면 공급이 촉진되겠습니까, 억제되겠습니까? 이거 환노위나 산중위에서 토론회 보셨습니까? 산중위하고 환노위에서 연석회의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더욱 안타까운 것이 해외 선례까지 있습니다. 영국이 2008년에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전력·환경, 대한민국이 지금 추진하듯이 복사판으로 통합했습니다. 전력공급이 줄어들었고 가격이 폭등했고 당연히 제조업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2023년에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중심 부처로 개편을 합니다.

영국이 20년 전에 들어갔던 과오를 저희는 지금 다시 하자는 겁니까? 저희가 해외 출장 가서 해외 사례 배우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해외에 이런 엄연한 사례가 있는데 우

리는 왜 그 시행착오를 시도하는 겁니까?

독일은 2021년에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문제에 빠졌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해서 불과 2년 만인 2023년 다시 환경부와 경제에너지부로 재출범을 합니다. 환경과 에너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부처와 기관으로 만든다는 생각은 신기루처럼 무너졌습니다.

영국,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 번째 사례가 되실 생각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에너지 안보이고 또한 환경 보호입니다. 환경은 환경대로 발전시키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해야 합니다. 유럽의 실패 사례를 따올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살필 점이 있습니다. 탈원전 자체를 뭐라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탈원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신재생 기술로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고, 특히 다가오는 AI 시대에 데이터센터 전력 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모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탈원전도 좋고 신재생도 좋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과 사전에 토론하고 동의는 구해야 합니다.

진보는 급진으로 망하고 보수는 수구로 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가 에너지 공급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을 밀어붙이시는 그 자신감에 놀랄 뿐입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핵심은 이제 전환입니다. 여전히 지구는 80% 정도의 에너지를 화석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20%만이 신재생과 원자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원자력이 30%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30% 정도지요. 원자력과 신재생을 고르기보다는 화석, 석탄과 석유와 가스의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 이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력하려면 원전과 신재생 둘 다 필요합니다.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논할 시간도 이유도 이제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향한 백년대계를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굳이 환경부에 에너지실을 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논리는 에너지실에 잘 주입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시절에도 대통령실의 하명으로 탈원전이 이루어졌던 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원전과 신재생을 화해시켜야 합니다. 이게 국가가 갈 방향입니다. 후손들에게 할 도리입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어설프게 만들어서 영국과 독일의 실패를 반복하고 에너지 비용을 급등시키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5년 차인가요, 그때 원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탈원전을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막상 전기가 부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년 차에 쉬쉬하면서 서둘러 원전 공급을, 원전 재개를, 원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부랴부랴, 부랴부랴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경험에서 배우고 교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감상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유럽을 넘어서고 전 세계의 G7, G6로 올

라서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행착오까지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결과 위에서 당당하게 에너지 백년대계를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기후에너지부를 탄생한다 해도 왜 토론을 안 하십니까? 환노위에서 이것 토론이 됐습니까, 산중위에서 됐습니까? 연석회의를 하셨습니까? 동의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성평등부를 출범시키십니다.

먼저 헌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다시 읽겠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대한민국헌법 36조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을 헌법의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직개편안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논란이 얼마나 첨예한 사회적인 논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캘리포니아나 이런 곳들에서는 트랜스젠더 등까지 성을 다 세분화하는 추이가 있어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환을 정부나 주정부가 지원하는 시도까지 있어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자녀 중의 하나가 성전환수술을 해서 거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분개해서 민주당 지지자에서 공화당 지지자로 돌아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 2기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자기가 그렇게 뛴 이유가 바로 성의 혼란을 가져온 진보 정책이다, 일론 머스크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론해야 되는데 내용도 없이 법안에 한두 줄 써서 지금 일주일 만에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직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혹시 양성평등이 아니라 다양한 성평등을 지금 기획하시려는 것입니까? 그 첨예한 사회적 논쟁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토론할 기회를 가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론도 생략하고 답변도 생략하고 일주일 만에 그냥 달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관점이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급하고 중요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아주 중요한 관점은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숙제가 뭡니까? 저출산과 인구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자고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구기획부를 한다든지 경제기획원을 부활하면서 인구 기능을 집어넣든지 뭐 이 정도 고려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일본도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인구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처를 관통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종합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인구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경제기획원을 부활하면서 미래전략 기능을 보강하면서 인구를 집어넣든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관점을 놓쳤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는 세계전략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것이 무슨 토대 위에서 가능했습니까?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창궐할 때,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댔을 때 우리는 유엔군과 함께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그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유무역지대로 나갔고 WTO 체제로 나갔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뤘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시도했던 1950년대 최초의 세계전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느냐, 민주화되느냐 그 기로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통찰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편입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결정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세계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왜냐? 저희는 자유시장경제,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에 편입돼서 성공했지만 그 자유진영이 지금 현재 새로운 변신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부담을 높일 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로 한 한미일 협력, EU 등등의 탄탄한 자유진영 협력이 있고 중국·러시아·북한의 연합체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등등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희가 한미동맹을 맺었던 시기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저희가 수출했던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없었지요, 아예. 그다음 가발, 인삼 이런 것 수출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그때 수출했던 그런 것 다 일본 정도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방산, 최첨단 제조업 제품과 전자제품을 저희는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국은 이제 더 이상 일본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갤럭시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에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도 달리고 미국에서도 달립니다.

동맹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세계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한미동맹을 짜셨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시대의 세계전략을 짜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안위에서 이제 국무부 같은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선임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미니스트리 오브 디플로머시(Ministry of diplomacy)' 이렇지 않고 '스테이트 디파트먼트(State Department)', 국가의 일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CIA도 국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품이 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비동맹인 지역에서도 시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대한민국에 지금 맞는 것은 외교부를 국무부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을 바꾸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국

회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논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통위는 아예 토론조차 못 했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사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직을 했는데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공직을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일단 호구지책이 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좌절감이 컸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역모션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역모션이다. 정부는 바뀌는데 어떤 정부에 충성해도 결국 그다음 정부에는 찍히기 마련이다. 열심히 일하면 바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하면 부역자로 몰립니다.

대한민국은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 정권 교체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호기롭게 정부조직 개편을 하십니다. 거기에 공직자 사기 문제는 들어 있습니까? 지금 개편하는 이 내용들, 실제 적용될 공직자들과 토론은 해 보셨습니까?

떼었다 붙였다, 공직자들의 열패감은 심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이 상복을 입고 출근한다는, 상복 아니면 조기를 달고 출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짓밟고 갈 만큼 급하신 일입니까?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흩어져서 일할 그들은 지금 마음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검찰개혁 해야 합니다. 그러나 1만 1000명의 수사관, 2300명의 검사는 1년 동안 시행기간이 있으니까 그사이 잘 준비하면 되니까 마음잡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 입법부는 입법의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바꿀 권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생 범죄 핑퐁의 책임, 1년간 사법공백의 책임, 이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저희는 복잡한 것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석회의에서 토론하자 얘기했습니다. 발목 잡기로, 요즘 국회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믿지 않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면 민주당이 믿지 않습니다. 서로의 불신이 높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주일, 열흘 만에…… 제가 지금 짧게 요약만 하려 그래도 한 시간 가까이 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직생활 할 때 싱가포르 공무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이 참 청렴하고 유능하고 일을 잘한다'. 제가 그래서 싱가포르 공무원 제도를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되 처우를 민간 수준으로 해 준다입니다. 제 후배들이기도 한데 수많은 대한민국 공직자들 싱가포르 공무원만큼 자질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넘치고 찬다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민간 수준의 처우를 주지 못하면서 싱가포르 공무원처럼 일해라, 이것은 반지성이고 비과학입니다.

저희가 정부조직을 바꾼다면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람보르기니, 포르쉐 뭐 이런 게 정말 대단한 슈퍼카 아니겠습니까? 밟으면 시속 300㎞, 40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람보르기니도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으면 공직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

의 의욕을 높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희망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론하기를 희망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금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체 그림으로 모아 가지고 합격점이 있는 것과 낙제점 또 퇴장할 것, 뭐 이런 것 등을 조금 분류해 봤습니다. 한번 분류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데 이 건은 퇴장입니다. 레드카드를 날리겠습니다. 헌법기술을 활용해서, 법기술을 활용해서 위인폐관하는 거라 이것은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퇴장을 명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시는데요, 여기에도 논점은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계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내용을 안 주셔서 알 방법은 없지만 만약 통계 기능을 발전시키는 거다? 합격 드리겠습니다. 합격입니다.

다만 통계와 데이터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중시하는 데이터는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 통신 데이터 등등 다양한 데이터이고 지금 통계청에서 다루는 통계라는 것은 경제 통계, GDP, 인구 등등 딱 정해진 항목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데이터일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통계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잘 구분하시고요, 여당이 잘 구분하시고. 어쨌건 합격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이것을 분리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시지요. 작아서 통합했던 기획예산처를 더 작게 그리고 예산 기능이 없어서 경제 조정이 안 돼서 통합했던 재정경제부를 재정경제부로, 논리가 없습니다. 과락입니다. 둘 다 낙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를 작게 만들어서 정치권 입맛대로 쥐락펴락,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꿉니다. 그런데 국내 금융은 재정경제부로 가지요. 그림이 살짝 복잡한데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금융은 재경부로 가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정책 기능도 또 이분화했습니다. 이것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해 봤다가 문제가 많아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통합했었습니다. 국내 금융과 금융감독 기능이 흩어져 있으니까 일이 안 된다, 법 관리하는 데 따로 감독하는 데 따로, 일이 안 된다 해서 통합시켜서 금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대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합격점을 드리겠습니까? 이것 낙제입니다.

그래서 금융정책 기능도 두 개로 갈라지고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금융감독원도 두 개로 나누고, 금융감독 체계를 결국 사분오열시킨다고 저희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실물은 글로벌인데 금융은 내수산업인 것입니다. 금융은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해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낙제점입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만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을 쏙 빼서 가져오는 겁니다. 전력기본계획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실패 사례가 현저하고 규제부서가 공급 기능을 가져간다는 언어도단입니다. 즉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에너지와 환경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이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이제 안보이고 환경은 환경대로 발

전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채점 거부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기후에너지부가 그렇게 갈 게 뻔하긴 하지만 법안에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점 거부입니다.

그다음,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합격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식재산 중요하고 특허라는 이름보다 포괄적인 지식재산이라는 이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좀 근사해진 것도 같지만 통계는 데이터이지만 데이터는 통계가 아닐 수 있다, 이 점 지적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나 특허청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처로 바꾼다, 말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만 통과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일주일 만에 통과시키면 안 되지요. 산중위 토론은 거치셔야지요. 공청회도 거치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집어넣고 혹시 놓쳤던 것 있으면 빼고, 그게 의견수렴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생략하십니까? 잘한 것도 있는데.

그다음,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부처는 그대로 있는데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을 좀 시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과기정통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기부총리 있어야 됩니다. 저도 격상하는 거 동의하고 기왕에 격상하신 거 이름만 격상하지 마시고 기능도 좀 발전시키십시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의 번영에 이르렀습니까? 결국 인재의 힘이고 과학기술의 힘 아닙니까? 공과대학을 나온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부총리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방위 토론을 안 거치셨습니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까 퇴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꿉니다.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이 엄연한데 성평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쓰는 거 이거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얼마나 큰 사회 갈등으로 번졌는지 그리고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됐는지 잘 알기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선거 이겼으니까 내가 후다닥한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낙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정책을 성평등가족부로 보내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합니다. 산업안전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투영됐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건 합격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합격점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생각하신 이유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벌은 광범한데 예방은 미루어지고 치유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왜 다 떠나겠다고 난리입니까? 1번 노조법, 2번 중대재해처벌법, 3번 세법입니다. 세법은 기재위에서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환노위에서 하고 노동법도 환노위에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른 법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기업은 다 적용됩니다. 그 인센티브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처벌되고 노조 권한이 세고 세금은 많이 내고, 누가 사업하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내수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계속 계엄 탓만 하실 겁니까? 100만 명 폐업 시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니 왜 요즘은 얘기 안 하십니까? 이제 여당입니다. 여러분들 고치셔야 합니다. 협력이 필요하면 협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합격점 드립니다.

그런데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유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을 차관으로 격상한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격상했으니까 이제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시고 예방 강화하고 치유를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격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합격입니다. 좋습니다. 소상공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이 본회의장에서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시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정권을 이어받으셨으니 해결하십시오.

제가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고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외환위기 이후 누적되어 온 자영업자 과잉과 내수경기의 구조적인 침체의 문제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차관이 탄생하셨으니까 빨리 해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합격점 드립니다.

마지막이 검찰청에서 기소·수사 분리를 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겁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지요. 일단 이름 자체가 검찰청을 없애는 건데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 심의요건 중의 하나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것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 논란을 만드십니까? 그냥 헌법 좀 건드리지 말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공소청이라고 굳이 하십니까? 그냥 검찰청이라고 하시고…… 아니, 검수완박 하시면 되잖아요. 기소·수사를 분리하십시오. 기소·수사 분리에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논란을 만드십니까?

검찰개혁에 동의한다고 제가 세 번 네 번 말씀드렸는데 열 번 스무 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잘 개혁하시자고요. 기소·수사 분리하고 검찰청 직접수사권 없애는 것 없애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는 건데 그 경찰의 수사권을 누군가 견제하고 보완하고 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완수사 요청권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수사지휘권이든 보완수사 요청권이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소청을, 이 이름을 꼭 굳이 관철하시려는데 토론을 안 해 봤으니 저희도 정확히 뜻을 유추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희는 추석까지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다는 민주당의 약속에 발 묶여서 정부조직이 이렇게 속도전으로 일정을 정해 놓고 날짜를 정해 놓고, 이건 답정너가 아니라 날정너입니까, 뭡니까? 일정을 정해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발목 안 잡습니다. 발목 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합격한 것 많습니다, 지금.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특허청, 지식재산처. 과기정통부 부총리 승격.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차관 승격하는 것.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만드시는 것. 이것 다 합격입니다. 빨리빨리 하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저도.

다만 이것도 상임위 토론은 한번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공청회 한 번 더 하시고, 저희 국민들이 그 정도 인내심이 없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것 이것 상당히 이상합니다. 재고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철회하셨지만 제가 이미 사분오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건 정말 이런 관행을 남기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든 다 헌법은 큰 명제, 큰 조항 위주로 돼 있습니다. 큰 원칙, 국가가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정부의 조직과 큰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은 그 헌법 조항 밑에서 형성되는 관행이 세부적인 헌법이 됩니다. 헌법적 관습은 헌법의 일부이다, 이것은 제가 헌법학자들께 배운 것입니다.

저희는 정부조직을 바꿔서 사람을 쫓아내는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선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 선례를 남기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부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좀 거치시고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얼마나 다른, 사회적 화약고가 될 수 있는지 좀 검증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무엇이고 국회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의제라는 것이 이런 것 좀 토론하고, 국민들은 일상에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앞과 뒤, 좌우를 살펴서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 그게 저희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검찰청 개혁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 동의합니다. 저는 특히 더 동의합니다.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시도해 볼 때 됐습니다. 검수완박, 해 볼 때 됐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에서 불거진 무한 핑퐁의 문제는 고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쳐야 합니까? 바로 국민을 위해서 고쳐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수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 갈 집을 정해 놓고 기존의 집을 허무는 겁니다. 선신구폐, 신조직을 세우고 구조직을 폐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2300명의 검사와 1만 1000명의 수사관은 향후 1년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까요? 공중에 붕 뜨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엄마이고 아빠이고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공소청을 갈지 중수청을 갈지 아니면 민간에 나가서 취업을 해야 할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신조직을 세워 놓고 구조직을 폐하면 이런 붕 뜬 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1년이라고 하지만 1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피해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권한은 저희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조금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저희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노력은 다해야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이유를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논점들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불만스러운 점이 있으셔도 편히 말씀 주십시오.

검찰개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검찰청 간판을 떼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고 핵심 내용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자료도 잘 안 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열심히 해 보니 그렇

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앤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저에는 저희 정치가 검찰화되고 저희 정치가 사법화되고 이게 결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특히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정말 절절하게 동의가 됩니다. 이제 정치는 더 이상 검찰화가 되거나 사법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과 검찰까지 정치화되는 겁니다. 이것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 출발점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동의가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수술을 가면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환부를 작게 절제하는 것이 명의입니까, 아니면 환부를 크게 절제해서 생살까지 다 자르는 게 명의입니까? 금번 검찰개혁안은 생살을 너무 많이 자른 느낌입니다.

검찰의 정치화를 촉진한 것은 저는 검찰 특수부로 이해합니다. 제가 틀렸다면 편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검찰 특수부만 폐지하면 안 됩니까? 저는 검찰의 형사부, 공안부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먼저 검찰 특수부만 폐지하는 것도 제안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안 안 하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동의가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였기 때문에 기소권만 가져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무한 핑퐁, 검찰청과 경찰청 간의 핑퐁 게임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이 피해, 이미 불거져서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도 남남처럼 일하면 안 되고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게 보완수사 요청권 혹은 수사지휘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쪽이 한쪽을 조종할 수 있을 때, 지휘할 수 있을 때 수사가 지연되지 않고 촉진되고 또 수사가 왜곡되지 않고 견제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머리만 하고 경찰은 손발만 하고', 예전에 유럽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검사를 발명해 낸 유럽에서 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함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와 손발의 기능을 따로따로 뗀 건데 그렇게 돼야 경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보완되고 때로는 촉진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견제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지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 따로 손발 따로가 아니라 아예 목과 손을 물리적으로 잘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소·수사 분리는 더 확실하겠지요. 목을 잘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 자체가 죽습니다. 저희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것은 상호 견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지 수사와 기소가 남남처럼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에 직접수사권을 준다면 좋습니다. 이미 많이 수사하고 있고. 그러나 그 수사 기능이 견제되고 촉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이 일단 검찰로 다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자질구레한 사건까지 다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중에 좀 가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식의 논리이고 이런 것 토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지

금 대한민국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런 토론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행안위에서도 시도해 보려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일정을 단축시켜 버리셨습니다. 발목 잡기라, 발목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걱정할 뿐입니다.

민법상의 공익 대리인 문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도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적으로 또 후견인이 지정이 돼서 판단 능력이 특정한 건에 대해서 부족할 경우에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아주 더 좁혀서 특정한 단기간이나 특정 거래만을 위해서 후견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지명하는데 가정법원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누군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검사가 합니다. 이번에 공소청으로 바꿔 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에서도 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걸 걱정하는 언론 기사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상임위가 한 20개 될까요? 그 정도의 상임위를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또 그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사무처에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공청회 하라고 공청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에 오실 대한민국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 다 안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은 딱 세 가지 가지고 넉 달 걸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은 13건을 가지고 열흘 만에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산수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서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니까. 저부터 좀 벗어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제가 잘 들을…… 아주 경청합니다. 그런데 열세 꼭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열흘 만에 통과시키시는 것…… 오죽하면 제가 합격점까지 골라 드리겠습니까, '이것 먼저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검찰청 개혁에 찬성하는데 뭘 그렇게 급히 하시는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사경 문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2023년 기준으로 총 2만 604명이십니다. 국세청, 관세청, 환경부, 보건쪽에도 계시네요. 소방청,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에 총 2만 명 넘게 계신데 이분들은 검사의 조력 없이 수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2만 명의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물론 1년 동안 잘 연구해서 문제없게 하겠다고 하시겠지요. 그렇게 좀 안 해……

저는 한 몇 달 정도 집중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선신구폐, 신조직을 먼저 세우고 구조직을 폐해야 한다 이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과도기적 업무 혼란을 없앨 수 있고 저희가 위임받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칙 627개를 통해서 정부조직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바뀌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바뀌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장관 이런 이름들이 바뀌는 것, 기획재정부장관 이름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꿔 줘야 되겠지요. 검찰총장의 이름은 공소청장으로 바꿔 줘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 하나씩 다 바꿔야 되니까 법을 1개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몇 개의 법을

바꾸느냐? 법 기준으로, 부칙이 627개니까 법을 한 627개 정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조직법 부칙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데……

자, 보십시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기존에 검찰청 혹은 검찰총장으로 써 놨던 것은 누구로 쓸 겁니까? 공소청장으로 쓸 겁니까, 중수청장으로 쓸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도 못 봤고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런 걸 입법의 혼선이라 하는 겁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대 안 합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세 꼭지 정부조직 개편하는 데 넉 달 걸렸습니다. 이번에 13건, 지난번 3건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대하고 방대한 13건을 바꾸시면서 지금 열흘 만에 하자 그러십니다. 상식선에서 이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어떻게 토론 한번 제대로 안 하고 합니까? 산업중소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재위 다 거쳐야 하는 토론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토론하고 공청회 하고……

여야 관계 안 좋습니다. 그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미 대선도 졌고 저희는 새출발하는 차제입니다. 발목 잡기만 가지고 저희가 정당활동 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은 정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정부조직은 특정 정권의 것도 아닙니다. 충실히 토론해서 전문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문제를 요약하면 수사·기소 분리는 좋은데 기관 간 핑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 조직을 먼저 만들지 않고 구 조직을 폐하는 문제, 선신구폐의 원칙을 어기는 이 과도기적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법상의 공익대리인 문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의 문제, 부칙 627개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검찰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응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들을 일주일 동안 다루는 슈퍼맨은 없습니다. 슈퍼 국회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 한두 달 정도, 아무리 압축해도 한두 달 정도 논의해서 가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승격, 여가부 폐지 3건 가지고 넉 달 걸렸는데 저는 그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봅니다. 새 정부가 출발하면 정부조직을 통치 철학에 맞춰서 바꿔서 빨리 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제출하셨으니까 최소 한 달 플러스 한 달, 원 플러스 원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재위·환노위·산중위·여가위에서 토론을 하고 맹점을 짚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나은 정부조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후다닥, 뚝딱 일주일 만에 밀어붙이시면 이런 것을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책임과 귀책은 이재명 정부에 남는데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질게요」 하는 의원 있음)

책임은 어차피 지시니까요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 걱정을 말씀드리니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견제와 균

형이 되겠지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봐서 경찰·중수청·공소청으로 볼 때는 집중과 해체입니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아예 격하를 시키고 해체 수준으로 가고 경찰로 집중되고 중수청으로 집중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세우십시오. 이거 정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에 문제가 남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헌법적 교훈의 경로도 설명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경찰 권력이 문제였습니다. 자유당 때 특히 그랬고 등등 해서 대한민국은 검찰 권력이 강화됐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권력이 강화되다 보니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시듯이, 지적하시듯이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 동의합니다. 달도 차면 기웁니다. 검찰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명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직접수사권을 다 없애게 되면 보완수사 요청권이나 수사지휘권을 남겨서 민생범죄가 핑퐁 속에서 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수사가 2년 지연되고 5년 지연되고 누가 피해 보고 누가 웃겠습니까? 범죄자는 웃습니다. 피해자는 웁니다. 왜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으시고 일주일 만에 밀어붙이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170석 가까이 계신 절대 권력이십니다. 대통령 권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지지층도 탄탄하십니다. 왜 몰아붙이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통위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논란이 컸던 곳입니까?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결국 2인 위원회로 기능 장애를 고착화시키셨고 2인 위원회가 한 일이 잘못됐다 또 공격하셔서 방통위는 정말 전혀 제 기능을 못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셨으니 5인 방통위 체제를 다시 만들면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도 대화하시고 위원장 임기를 지키는 노력을 좀 하시고 정 안 되면 또 물러나라고 정치적으로 요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려고 조직을 바꾸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까?

일하시면서 답답한 점은 알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사람 내보내려고 조직 분해할 정도로, 조직 바꿀 정도로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저희는 과방위에서 토론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님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별로 일도 못 하고 맨날 조리돌림만 당해서 그분 실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크게 보는 거는 지금 민주당 아니신가 싶은데 저는 하여튼 불편합니다. 사람과 연계돼서 조직을 바꾼다, 이건 진짜 창의적이라고 해야 할지 이걸…… 아,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열심히 좀 분석해서 하려고 그래도 과기정통부에 있는 유료방송 진흥 기능 조그만 거 있는데 뭐 중요한 기능이겠지만 그거 하나 옮겨 온 거고, 과기정통부에 있던 거를 지금 방통위로 옮겨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없었습니다. 맥락도 없이 옮기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에 배석을 금지시켰고 또 방송 3법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빠득빠득 옳은 얘기 했고 '아,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겠다' 그거야 뭐 세간에서 누구나 보면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때 오비이락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별 변화도 없

이 바꾼다, 그러면서 조직이 폐관됐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나가고 새로 뽑는다, 이것 앞뒤가 딱 맞는 그림 아닙니까? 저희가 머리가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해서 과방위에서 토론이라도 하고 전문가 공청회라도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런 것 다 생략하고 일주일 만에 하셨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겠다, 첫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행안위에서 들은 건 그렇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권한이 집중된다 그래서 분리한다, 헌법상 견제와 균형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예산처가 그때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작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작아서. 경제기획원을 재무부랑 합쳐서 재정경제원이 탄생했는데 외환위기 때 이 부처가 너무 커서 공룡 재정경제원이라 대응이 안 됐으니까 쪼개자 해서 탄생했는데 기획예산처가 너무 작았습니다, 탄생해서. 그래서 기획예산처는 너무 작고 재정경제부는 큰데 예산 기능이 없으니까 경제정책을 조정할 수 없고 이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합치자. 그래서 그냥 기획재정부로 합치되 예전처럼 공룡이 되면 안 되니까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빼내자, 이게 역사적인 순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고치면 이 연속선상에서 가야 됩니다.

기획예산처를 만드는 건 좋은데 작아서 문제였던 기획예산처를 더 작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달랑 예산실하고 미래전략실 그 정도만 가던데 그래서 작동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동하기 어려운 작은 부처를 만드는 저의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야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여당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재정 포퓰리즘을 하고 계십니다. 소비쿠폰, 대선 기간 중에 공약하셨습니다. 소비쿠폰 두 달 효과 있습니다. 세 달부터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채 찍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구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운전대에 앉으셨습니다. 소비쿠폰에 의존해서 경제 못 살립니다. 자영업자 폐업 못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지르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 반대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까지 더 이상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작아서 문제였던 기획예산처를 더 작게 만든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재정을 포퓰리즘에 동원한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지적드려야 됩니다.

기획예산처를 탄생시킨다면 기획예산처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전망하고 기획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획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제정책국도 넘어가야 되고 예산에 기반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조정국도 넘어가야 하고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관리국도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에 다 남겨 놓고 예산실하고 몇 개 기능만 해서 기획예산처를 만든다, 저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 금감위와 재정경제부

의 금융정책 기능이 분리돼 있으니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 때문에 반성으로 금융위원회를 합친 겁니다. 오늘 철회를 하셨지만 철회 몇 시간 전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되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기능으로 포함되는 분리안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답지 않고 재정경제부는 재정경제부답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같지 않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삼분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안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경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찢어발겨서 목적하는 바를 모르겠습니다. 해서 낙제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추구할 바를 얘기하고 조직을 설계해야 됩니다.

경제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답게, 기획예산처답게 탄생해야 됩니다. 경제를 총괄한다 그러면 재정경제부답게 탄생을 해야 됩니다. 금융을 발전시키겠다 하면 금융위원회답게 보강이 돼야 됩니다. 뭐 하나 달성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단과 목적이 일치되지 않는 수목불치, 수목불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재위에서 이런 점들을 토론했다면, 더 정확하게는 정무위·기재위 연석회의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토론했다면 많은 논점들이 얘기되고 5년짜리가 아니라 몇십 년짜리 좀 괜찮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170석 가까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면 저희가 반대할 리도 없고 지금도 반대 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좋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수당이신 것처럼 이렇게 날치기로 졸속으로 일을 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얘기를 조금 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대미 협상 문제를 같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500억 불 합의했다 했는데 지금 대단히 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서명했으면 탄핵당할 뻔했다' 외신에까지 얘기하셨던데 일단 꼬인 것을 자인하신 것이지요.

저는 한미일 협력을 이어받으신 것 그것은 평가드립니다. 국정을 맡으면 옛날에 했던 얘기나 기분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미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에서 안전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전후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70년 정도 됩니다. 일제시대가 있었고 북한이 침략했었고 또 중국이 우리를 괴롭혔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중립화되어서 저희 스스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70년의 시간, 그 시간은 무엇 위에서 가능했습니까?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반미냐 친미냐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미국이 동맹으로 있을 때 한반도가 유일하게 중립화되는 것입니다. 70년 가까운 동맹의 기간 동안에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군사협력 속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같이 경계하고 동시에 자유무역지대를 같이 키워 나갔습니다.

저는 개인적 취향을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았던 유사 이래 동맹은 한미동맹입니다. 만약 한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었을 때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우리 후손들이 잘산다 그러면 중국과의 동맹을 택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동맹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우리 당은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친미와 반미가 아닙니다.

한미동맹 속에서 한반도는 중립화되고 자유무역지대를 향해서 수출을 할 수 있고 오늘의 번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이어받아서 무진 애를 쓰시는데 수고를 평가드립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더 따질 거니까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럽, 한국이 모두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를 밝혔는데 유럽은 유럽 GDP에 비해서 6.9%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13.1%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20.4%를 제시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미국과 안보적인 협력의 상호 이익이 큽니다. 우리가 GDP 대비해서 작은 금액을 부르면 불렀어야지 왜 이렇게 무리한 금액에 협상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3500억 불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의아하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내는 돈인가? 민간투자를 포함한 돈인가? 10년에 걸친 것인가? 몇 년 안에 하겠다는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환보유고 얘기까지 슬슬 나오고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얘기까지 나오는 것 보니까 이것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포함한 게 아니라 이 3500억 불은 오롯이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인가 저는 추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어떻게 GDP의 20%에 가까운 투자를 미국에 한다는 말입니까? 이 금액 제대로 책정한 것입니까? 동맹에도 계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친구 간에도 계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논리로 3500억 불이 시작된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정부질의에서 보니까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잘 돼서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하시고 다만 세부적인 것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시던데, 아니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3500억 불이 무슨 100원입니까, 200원입니까? 3500억 불을 투자하면서 세부적인 걸 짚지 않고 합의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대한민국정부 지금 국채 찍고 있지 않습니까? 3500억 불을 내역도 합의하지 않고 합의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될 때는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일을 내려놓거나. 한미 협상이 나라와 후손들의 명운을 가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발목 잡지 않습니다. 문제점 지적하는 겁니다. 대미 협상에 집중하십시오. 괜히 어설프게 나오지도 않은 결과 가지고 자화자찬하려다가 지금 크게 꼬이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간의 협상에 실무적으로 나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 첨예한 실무적인 협상을 할 때는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협상 컨트롤타워에게 갑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저희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였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수년간 아무 일 없이 일해 왔던 우리 국민들, 그것도 단순 노동도 아니고 점포에서 숨어서 단순 노동을 하는 국민들도 아니고 현대·기아차 배터리공장에서 일하는 고급 엔지니어들과 근로자들이 갑자기 체포를 당한다. 국제 협상에 임했던 저로서는 가슴이 철

렁한 일입니다. 이것은 협상이 꼬였기 때문인가. 이것은 미국의 시그널인가. 3500억 불을 합의한다고 호기롭게 해 놓고 내역이 합의 안 됐다고 말을 바꾸니 이것은 역린을 건드린 것인가. 용감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안타깝고 고통스럽게도 대한민국 자동차는 이제 25%의 관세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는 관세 0%, 일본 자동차는 관세 2.5% 이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일본 자동차가 관세 15%, 우리 자동차가 관세 25%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파쇄해야 되느냐,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EU는 GDP 6.9%의 투자 금액으로 해결했습니다. 일본은 13.1%의 금액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20.4%의 금액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그때까지 차분히 진도를 뽑으시고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렇듯 대외 경제 문제가 첨예합니다. 세입세출을 분리한다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이런 일에 걸맞은 조직 개편입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논점 같기도 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관점으로 조직을 흔들어서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키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대미 협상은 보니까 통상교섭본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정부조직상 그럴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일에 대비해서 미국의 상황, 미국의 인맥 잘 파악하고 구축을 해 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미국의 상황과 인맥 잘 볼 겁니다. 그러나 외교부만큼 침투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총영사관이…… 김건 의원님 계시네요. 우리나라 총영사관이 미국에 몇 개 있습니까? 10개? 총영사관이 10개 있고 대사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런 정도로 미국에 포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미리 미국의 사정을 살피고 인맥을 축적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의 실무 책임자로 기재부가 오든 산자부가 오든 환경부가 오든 컬래버를 해야 합니다. 이게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번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외교부를 국무부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에 보면 많은 예산이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외교활동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외교관들이 사람 만나고 정보 수집하고 인맥을 형성하는 유일한 예산인데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 늘려야 합니다.

외교관이 현지에서 쓰는 1시간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를 국무부 차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러한 대한민국이 다뤄야 되는 첨예한 협상을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부조직 개편안이 와야 합니다. 이런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처,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뭐가 됐든 지금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내수가 좋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구문제를 다루는 인구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경제기획원에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어 주든 별도의 인구부를 만들든 이런 걸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일방적 반대

가 아니라 대안도 드리고 견제도 드리는 겁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 세입세출을 분리한다는 데 있어서 작년, 재작년인가 한두 해에 걸쳐서 정부가 세수가 덜 들어왔는데 그거를 세입경정, 즉 추경예산안을 내서 세수가 덜 들어온 부분을 국회를 통해서 세입을 깎는 예산편성 작업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재원을 충당해서 세입을 자체적으로 바꾸었다, 조정했다. 세입경정이라고 하지요. 했는데, 그것은 국회의 권위를 크게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기재부가 세입도 갖고 있고 세출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간 큰 행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쪼개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 지점입니다. 세수가 덜 들어온 것은 기재부 잘못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재부 탓에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고금리가 시작되면 경기가 급랭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이 순이익이 0으로 되는데 법인세가 걷힐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돌지 않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걷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기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제 불황과 호황이 교차하고 있고 불황에는 세수가 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출을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경직적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근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안 들어온 것은 기재부 탓은 아니고 경기가 안 좋고 수출이 안 되고 기업에 이익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경정했다, 그것은 권한의 집중이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겠으나 그렇게 본다 한들 부처를 쪼갠다, 논리는 부족합니다. 부처를 쪼개는 논리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처는 오로지 과거의 문제에 더해서 미래의 비전을 통해서 재설계되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사람을 질책하면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질책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을 쪼개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통해서 국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 기능을 통해서 대미 협상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국가 기능을 갖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금번 기획예산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조직으로 탄생합니다. 경제부처 내부의 얘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만들면 아마 재정경제부에 남으려는 공직자가 더 많지 않을까,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답게, 재정경제부는 재정경제부답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판정 나지 않은 과거의 경험으로 조직을 쪼갠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기약하기 위해 부처를 만든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처의 사명이 뭘까요? 제가 아까 지적한 대미 협상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무역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내수경기가 왜 안 좋겠습니까? 수출의 대국 대한민국 내수경기가 왜

안 좋겠습니까?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수출기업들이 투자를 덜 하거나 인구가 줄어서 소비를 덜 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고령화돼서 소비를 덜 하거나, 결국 이 모든 것이 중첩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된 인구구조에 맞춰서 내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금번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만들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예'라고 답변 주신 만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누적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기간에 고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차관을 만든다는 점, 그래서 제가 합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해야 되고 과정 관리해야 되고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도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와야 됩니다.

소비쿠폰은 투입하는 방식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낮습니다. 두 달에 불과하고 진짜 취약한 분들에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호기롭게 하지만 후과는 반드시 남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라고 쩨쩨하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 빚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차관 탄생,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상공인에 필요한 부분과 그분들이 필요한 직업전환 등을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일 없이 만드는 차관은 공무원 월급만 더 나가는 겁니다.

산업안전차관을 만드시는 것도 잘하셨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점을 왜 토론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처벌 위주의, 처벌은 큰데 치유는 적고 처벌은 큰데 예방은 적은 이런 상황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처벌 위주의 법률이 탄생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사회 각계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강행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차관이 생기셨으니까 이제 처벌 처벌 처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 예방 예방, 치유 치유 치유, 균형 되게 보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부총리 탄생하는 것도 잘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토론을 안 거치시고 일주일 만에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중대재해법, 산업안전, 저희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로 돼 있고 노동법이 이번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불법파업, 아마 법안에 '불법파업'이라고 들어갔을 겁니다, 제 기억에. 노동법 3조였을 겁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따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조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에 어떻게 불법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와 경영자가 컬래버하지 않으면 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편만 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 측의 입장만 편들면 노동자가 피해를 볼 것이고 노동자 편만 들면 사 측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내수경기의 문제인데 이것은 수출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문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GDP 통계를 추적해 보시면 단박에 나올 문제가 건설경기 문제입니다. 즉 부동산 문제입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을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100명 중의 1명에는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제대로 내실까, 제가 정말 관심이 높았습니다. 제가 강남구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2030 젊은이들에게 예민한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한강벨트인데 한강벨트 공급책은 안 나오고 수도권 3기 신도시, LH를 통한 공공개발…… 아니, 이게 미스매치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님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9·7 대책에 대해서. 9·7 대책 내셨으니까 6개월 후에 내년에 삼땡 대책을 하시든지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오르는데, 그때 어떻게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동일하게 오르겠습니까? 선호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역의 공급을 적절히 잘 늘려 주는 것 이건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이 많지만 한때 하우스푸어를 걱정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과거, 멀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해서 집값이 잡혔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하우스푸어를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종부세를 키우고 재건축 분담금을 키우고 그래서 선호 지역의 공급을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을 도입해서 임대인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전세 가격이 역전돼서 전세사기의 도화선이 됐고 전세사기의 피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누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3대 생필품입니다. 부동산 안정되어야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한강벨트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대안도 제시드립니다.

그런데 금번 조직개편에서 이런 것 잘 다룰 수 있게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처 빼내고 재정경제부 만들고 금융위원회—철회하셨지만—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하고 비례와 견제와 균형?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과 해체입니다. 집중과 축소, 그렇지요. 집중과 축소입니다. 제가 볼 때 좋은 정부조직 개편 아닙니다. 그리고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이런 데서 연석회의를 해서 상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통을 가지고 국토교통을 다뤄 왔으니까 그대로 두는 것, 뭐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여기가 문제라면 이것을 토론을 해야지요. 대통령선거에 이기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석으로 의석이 거대하신 것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토론 없이 이렇게 열흘 만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다시 설명드립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그리고 여가부 폐지 이 세 건 가지고 넉 달 걸렸습니다. 이 세 건 가지고 넉 달 걸릴 게 뭐 있습니까? 그때는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몇 꼭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열세 건입니다. 그리고 열흘입니다. 그리고 그 열세 건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국가데이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성평등가족부 등등 굉장히 첨예하고 방대한 논점입니다. 열흘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재위 토론, 환노위 토론, 산중위 토론, 여성가족위원회 토론 다 생략됐습니다. 뭐 이것까지 다 생략을 하십니까? 어차피 법사위원장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제가 국회 와서 1년 보니까 여기가 진짜 패스트트랙입니다. 진짜 패스트트랙은 그래도 6개월이 걸리는 것이고 여기야말로 기습적으로 해서 바로 본회의로 상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것을 일주일 만에,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통과시키십니까?

지금 이 열세 건의 방대한 정부조직 개편 이 정도면 대폭이 맞겠지요. 소폭은 아니고 중폭과 대폭 사이 어디인 것 같은데, 중대폭이라고 하지요. 중대폭 정부조직 개편 정도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부조직 검사만 2000~3000명에 수사관 1만 1000명, 이 공직자들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을까요? 권력에도 서열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정하면 행정부는 그냥 하는 겁니까? 저희가 민주주의를 꼭 이렇게 다뤄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미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대미 협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대미 협상이라는 것이 단발성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미국이 동맹관계를 재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전략을 설명드리면 미국은 당초에 WTO에 중국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때까지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면 중국이 대한민국처럼 민주화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이 WTO 가입을 통해서 급성장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웨이 스파이웨어 문제가 미국에서도 터지고 영국에서도 터지고 등등 문제가 터졌지요. 미중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때마침 미국이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중국이 도광양회, 덩샤오핑이 설정한 대외정책의 기조, 그때 '향후 100년간은 미국을 대적하지 말라. 적대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때를 기다리며 실력과 힘을 길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이 화평굴기, 굴기를 들고나왔습니다. 화평하지만 굴기를 하겠다, 일어서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때마침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중국의 화평굴기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첨예했던 게 중국 화웨이 스파이웨어입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핸드폰, 중국산 핸드폰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기점들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G2 갈등입니다. 결국 패권경쟁입니다.

현재 21세기 중국의 외교는 전랑외교, 늑대외교까지 공격적인 외교를 택한 경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루이틀 누적된 문제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가지고 누적돼서 불거져 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금번 대미 협상은 이번 한 번으로 끝이 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협상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이 협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제가 그래서 외교부를 국무부로 발전시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WTO 가입을 해서 민주주의로 발전한다, 대한민국 같은 민주화된 국가로 간다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화웨이 스파이웨어 등으로 그 기대가 깨지면서 미중 갈등, 미중 패권경쟁이 시작되었고 그다음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분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값싼 생활필수품, 다양한 공산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략을 그다음에는 기술 통제로 전환했습니다. 한 단계 진화한 거지요. 그때 '스몰 야드, 빅 펜스(Small Yard, Big Fence)'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땅에 높은 담을 세운다, 즉 최첨단 기술에 집중해서 거기에 기술장벽을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AI, 5G, 첨단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기술 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빅 펜스 전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빅 펜스 전략도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국의 첨단 제품들을 중국이 많이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아이폰은 중국 화웨이가 조립을 합니다. 조립이 중국에 외주화되어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들 제조가 중국에 외주화되면서 기술 통제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중국 경제와 분리하기 위한 디커플링, 그다음 첨단기술에 장벽을 세우는 스몰 야드, 빅 펜스 전략 이 2개가 다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지금 전혀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세전쟁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관세전쟁을 시작하고 중국의 우회 수출로가 될 수 있는 캐나다, 멕시코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인 일본, EU,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협상은 하루이틀에 그칠 문제는 아닙니다. 금번에 저희가 EU나 일본에 비해서 협상을 턱없이 잘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다루겠다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닦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역전된 관세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25%가 웬 말입니까, 지금? 유럽도 15%고 일본도 15%고. 우리가 당할 수밖에는 없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상의 잘못으로 꼬투리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공부되고 관찰되고 또 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인맥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은 기재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외교부가 발전적으로 국무부처럼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금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그러한 문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대미 협상이라는 커다란 난관을 뚫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구 부족과 인구 노령화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조직 개편의 그림을 주십시오. 저는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행안위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세입세출의 분리, 세입경정을 혼자 하더라, 힘이 너무 세더라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힘이 너무 세면 그 힘을 좋은 일에 쓰게 하는 방법도 있고 견제와 균형으로 분리하면 그 견제와 균형이 우리를 좋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추억에 함몰되어서, 과거의 불편한 기억에 함몰되어서 정부조직에 칼을 대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조직은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활용할 정부조직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관찰하니 민주당이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잘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얘기하면 민주당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여야 관계가 그런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도 들을 얘기는 꼭 들어 주십시오.

국가 조직의 문제는 국민의 문제이고 역사에 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조직도 목표를 정하고 뭐를 좀 뭐답게 딱 만들어야 됩니다. 세입경정 스스로 하는 힘센 조직 쪼갠다 이런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처를, 예전에 작아서 문제 있던 것을 더 작게 만든다. 이것은 쥐락펴락하겠다는 뜻 아니냐. 저희는 오해든 이해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당은 소비쿠폰까지 나라 빚으로 뿌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견제하는 무제한토론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점이 상임위에서 토론만 됐어도 저희가 무제한토론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 토론조차 안 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 3건에 넉 달,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 13건에 열흘, 산수로 계속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풀어야 되는 내수부진의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고서 온라인 유통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쿠팡과 온라인은 불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 모든 곳에서 불황을 호소합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힘든 불황이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극화 문제, 부동산 경기의 문제 그리고 인구 노령화와 인구 부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숙제이고 이재명 정부의 숙제입니다. 이런 숙제를 들고 오면 저희가 반대할 일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상법 개정안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주도하셨고 1차는 저희가 합의 통과했지요. 2차는 강행 단독 처리하셨습니다. 주식시장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상법 개정안은 저는 찬성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밸류업 패키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저희는 어젠다를 펼칠 수 없었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가져가셨지요. 잘하셨습니다. 나라에 좋고 주식시장에 좋은데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주주를 중시하지 않았던, 주주환원율이 낮았던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문제를 고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즐기지만 마십시오. 주식시장은 실물과 괴리돼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실물경제는 전례 없이 높은 관세라는 무역 후퇴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경 안에 투자를 안 하는 투자 부진의 시대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급랭이 몇 년째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노령화되면서 소비가 부진한데 온라인은 잘되고 오프라인은 부진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균형적으로 보지 않으시면 주가지수 5000 시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지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저작권을 가져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 응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만 낙관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지 않으면 문제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법, 세법,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로 다루지만 그것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는 똑같이 규제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 법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동 규제, 세금,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상법 이 모든 것을 복합해서 기업을 할 만한지, 내 인생과 가족의 미래를 걸고 사업을 할 만한지 또한 근로자로서 이 기업에 내가 미래를 걸고 내 인생의 시간을 같이 쓸지 결정합니다. 부분적인 얘기를 듣고 부분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면 전체 그림은 깨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깨집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상법 개정안의 효과, 저금리의 효과로 오릅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를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의욕을 되살리지 않으면 그 잔치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법, 세법을 복합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기업 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사 측과 노 측이 균형을 이루는 선으로 재조정되어야 됩니다.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다루는 경제부처가 탄생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지금 현재의 그림은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재위에서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열흘 만에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옮겨서 기후에너지부로 만든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환경부는 규제 부처이고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실은 에너지 공급 부서입니다. 규제 부처와 공급 부서를 한데 묶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요? 저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 안 하셨고 토론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유추를 합니다. 2008년 영국은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설치했습니다. 에너지·기후·환경 이런 기능 등을 다 통합해서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설치했는데 전력 공급이 부족해졌고 전력 구매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폭증했습니다. 약화되어 가던 제조업이 결정타를 맞고 더 약화되어 갔습니다.

해서 2023년에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중심의 부처로 개편을 했습니다. 영국은 20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이런 좋은 선례가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 지금 영국이 잘못 진입한 실패에 그대로 다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 저희 중요시 여깁니다. 신재생 누가 중요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라는 것이 너무, 환경 규제와 에너지 공급을 묶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실패한 선례가 영국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독일도 실패했습니다.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했는데 결국 또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에 환경부와 경제에너지부를 분리해서 재출범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다시 실험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걸 고르면 이것은 옛날얘기 하는 겁니다. 이제 고르지 않습니다. 화석에너지를 줄이는 거지요. 화석에너지를 줄이는 전환, 에너지전환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신재생과 원전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EU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을 포함시킬까 말까 하고 있고 SMR은 상당히 좋게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고르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인생의 해법은 칵테일에 있습니다. 에너지의 해법은 믹스에 있습니다.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잘 꾸려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 전환을 졸속으로 하고 과격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계통이 망가지고 인프라가 망가져서 결국은 전환에 실패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벌어졌던 일 전해 들은 얘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기롭게 탈원전 했는데 이게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해서 그때 부랴부랴 원전 복구하느라고 5년 차에 난리가 한번 났었다고 합니다. 반복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에너지부를 하나 독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산업통상도 큰 기능이고 에너지가 이제 상당히 안보, 환경 모든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부를 하나 독립한다, 차라리 그것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 이것은 현실적 판단인지 감상적 판단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권 잡고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것은 합니다.

(「우리도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의 의무고요. 얘기드리는 것, 견제드리고 대안 드리는 건 저희의 의무입니다. 침묵하는 건, 그러면 국회의원 뭐 하러 하겠습니까?

(「상임위도 안 열면서 무슨……」 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 저희 다 열었습니다. 행안위에서도 토론 많이 생략하셨고요.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신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가 갖고 있는 맹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후에너지부가 현실의 전략 속에서 탄생하시는 것, 그런 탄탄한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장시간 무제한토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라는,

에너지실이 환경부로 건너간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조화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토론도 계획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상임위 토론도 없었고, 무제한토론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법 가지고 무제한토론을 하냐, 이것은 발목 잡기 아니냐. 제가 그런 말 들을까 봐 근거를 찾아보고 판단해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3개 꼭지 가지고 넉 달 걸려서 정부조직 바꿨습니다. 지금 13개 꼭지 가지고 열흘 만에 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토론하자 얘기하시고 필요하면 한 달 더, 원 플러스 원 정도 수순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의 문제도 지금 아마 어떤 결론이 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토론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가스·석탄·석유를 줄여야 하는 탈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과 신재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에너지 짝꿍일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이 그 짝꿍의 길로 가면 어떨까' 이런 정도 토론은 저희가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이 저희에 비해서 자본주의를 많이 오래 했기 때문에—시장경제를—그 면에서 앞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현재 상황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독일은 에너지 공급에 실패해서 큰 문제를 겪고 있고, 물론 러시아에 의존한 에너지 문제도 있지요. 그 지정학적 문제를 떠나서도 탈원전을 너무 심하게 했고 신재생에 과잉 의존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플랜더스의 개'라는 만화가 기억나실 텐데 네덜란드는 원래 풍차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중세부터. 그러니까 풍력이 발전했던 겁니다. 자연스러운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 곳에서 바람을 활용하는 것, 그것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바람 자원이 충분한지 햇볕 자원이 충분한지 저희가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에서 신재생은 신재생대로 발전시키고 또 탄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원전은 원전대로 발전시키고 이 믹스를 가져가면 됩니다, 이 믹스를.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토론이 생략되는 문제 이것은 국가적인 실책입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 만에 하십니까? 충분히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든 한 달 더하기 한 달, 제가 한 달 더하기 한 달을 말씀드렸는데 한 달 더하기 한 달 후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세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권력도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정부조직 개편이 된다 해도 남은 5년 임기 동안 그것이 제 길로 간다면 그게 이재명 정부에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을 다 생략하고 밀어붙이시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평등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예민한 지점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토론할 게 너무 많은 지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헌법에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헌법이 운영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양성평등을 쓰지 않고 성평등을 쓰셨습니다. 저희가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 소수자들은 항상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공동체를 꾸려 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은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에서 미국에서 성이 남성·여성·중성, 3개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논란이 되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성전환수술 이런 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하면서 문제가 돼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까지도 진보 정부에서, 진보 정파에서 돌아서서 보수 정부를 지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사안이 될 소지는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왜 토론을 생략하십니까? 스리슬쩍 혹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밝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런 거 다 토론하셨나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막상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인구문제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윤석열 정부가 작년 여름에 제안했는데 통과 안 시키셨습니다. 다수당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저희가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셨으니까 이건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출산과 인구의 문제, 이게 국가의 백년대계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정치하는 이유도 결국은 아이들 때문이고 후손들 잘되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취업이 늦고 그 여파로 결혼이 늦고 그 여파로 출산이 늦고 또 출산 자체, 양육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 또 고용의 문제 또 양육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주거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모든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의 부처가 필요합니다.

인구부 필요합니다. 경제기획원을 부활시켜서 거기에다가 관점을 집어넣든 기능을 집어넣든 인구부를 별도로 만들든 이런 거 만들어야 합니다. 금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토론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제한토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는 5대양 6대주에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미중 패권 속에서 지금 굉장히 현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 남미의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 유럽의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 시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정치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이틀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시대까지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저희가 포착할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미국이 무역질서를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이 무역의 질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것은 대한민국 세계 버전이어야 합니다.

선대들의 통찰로 우리는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한미동맹이 저희에게 자유무역시

장을 가져다 주었고 저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 기회를 파고들어서 붙잡아서 국민소득 3만 5000불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 번영을 이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번영을 더욱 키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번영을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세계 버전을 세워야 합니다.

보수 진영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서 언급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의 통찰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대한민국은 성립 불가능했습니다. 번영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그 번영의 기초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한미동맹으로 국민소득 3만 5000불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3만 5000불의 나라는 더 이상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신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의문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탈피할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한다고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은 관점입니다. 그러나 돈만 준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 노동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을 곳곳에 지뢰를 숨겨 놓고 기업을 하라 하면 그 기업이 쉽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기업은 자신의 운명과 가족의 운명을 거는 창업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창업자를 돕는 경영진 그리고 그 경영진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꽃을 피워 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종합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당일 때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노동법 이런 것들을 제안하시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 전술 설계를 정교하게 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줘서 거부를 하게 하고 그 거부권의 횟수를 누적해서 오만한 정부다, 오만한 정권이다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기발한 설계이다, 저는 작년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 저는 페이크로 가짜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기 위해서 했던 법안인 줄 알았는데 그 법안을 진짜로 밀어붙이셔서 통과시키셨습니다. 노조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조금 바뀌셨지만 또 밀어붙이셨습니다. 방송 3법 마찬가지고요. 이게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놀랍기도 놀랍지만 두렵기까지 합니다.

방송 생태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 보니 방송 생태계는 노사가 분리되고 노노가 분리돼서 지금 생태계가 엉망인데 그것을 치유하는 토론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3법은 그냥 강행 통과되었고 노조법도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이 번영을 이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점을 고쳐야 하고 동시에 이 고쳐진 지점에서 우리의 무역을 이어 갈 수 있는 세계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외교부를 미국형 국무부로 바꾸고 국무부가 CIA를 관장하듯 국정원도 국무부가 관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폭넓고 진정성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릴 문제는 공직자 사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쉽게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에게는 평생 일하

는, 청춘을 바쳐 일하는 직장의 변화입니다. 민주적 통제 속에서 바뀔 건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청 간판을 뗀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그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납득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적응하는 정부조직 개편이어야 합니다. 저는 정부조직 개편에 앞서서 오히려 공직자 사기 진작 대책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공무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정부조직에서 일할 때 상사로부터 '싱가포르 공무원을 한번 공부해 봐라. 거기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을 잘하고 유능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공직사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냐'.

제가 공부를 해 보니 두 가지 차이가 선명합니다. 싱가포르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처우를 민간에 비해서 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민간으로 갈지 공직으로 갈지 적성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물론 정권 변동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도시국가이고 리콴유 가문이 잘 지배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정권 변동이 극심합니다.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나 신분적 안정성은 저희가 더 정교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직급을 좀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급까지는 다 정무직으로 하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룰 세팅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교체되면서 공직자들은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역모션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역모션이고…… 이게 제가 공직을 떠났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정부에 충성하면 다음 정부에서 부역자가 되고 다음 정부에 충성하면 다다음 정부에서는 부역자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갈려서 어떤 공직자는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기도 하고 어떤 공직자는 민주당으로 출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청팀 홍팀의 구성 같기도 하고,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대한민국 정치 변동의 분열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서 자신감 있게 집권한 사람은 항상 정부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합니다. 이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될까요? 제가 정부조직 개편 실무도 한번 담당했었는데 말이, 여기서 저희는 글 한 줄 바꾸지만 과마다 간판 다 갈아 끼워야 됩니다. 조직도 바꿔야 됩니다. 부처 로고 바꿔야 됩니다. 책상 걸상 다 갖다 뺐다 해야 됩니다.

정부조직 안정되는 데 인사, 책상 걸상 교체·배치 등등 날밤을 새도 6개월 걸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됩니다. 공직자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고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그런 사사로운 걸 따지기 전에 대의를 따진다? 그것도 좋습니다. 대의 면에서 문제점 일곱 가지, 열 가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가지, 열 가지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걸 왜 상임위 토론을 하지 않았느냐, 왜 열흘 만에 밀어붙이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세 꼭지, 넉 달 걸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3꼭지, 열

흘 만에 하자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국회의 민주적인 토론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번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 진짜로 정부조직은 발전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분풀이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검찰청 간판 뗍니다. 기재부 쪼갭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부 만들어서 뭔가 시도합니다. 느껴집니다.

검찰개혁 동의한다고 제가 열 번쯤 말씀드렸는데 열한 번째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속도, 이런 식의 준비로는 민생에 부담이 됩니다. 힘없는 사람이 제일 서럽습니다. 경찰청, 검찰청 간의 수사 핑퐁의 문제는 이미 불거진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측하고 추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수사의 기간은 이미 두 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은 그냥 유실되는 것이고 2년, 5년이 걸린다는 건도 많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분들은 지역구에서 민원을 상대하시면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 경찰청, 교육청, 이런 청들 간에 함께 관리해야 되는 민원이 터질 때, 복합민원이 터질 때 가장 힘듭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서는 자곡동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출퇴근할 때 내릴 수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워다 줄 수 있는, 픽업할 수 있는 주정차구역, 픽업존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 픽업존은 경찰청에서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앞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자 교장선생님한테 다 민원이 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구청, 경찰청, 교육청 다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 풀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청 간의, 기관 간의 무한 핑퐁의 문제는 국회의원도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첨예한 문제입니다.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이 생기면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핑퐁의 문제에 빠질 겁니다. 핑퐁의 문제에 빠질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핑퐁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제가 행안위에서 여쭈었는데 1년간 시행기간이 있으니까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선신구폐, 신조직을 먼저 세우고 구조직을 폐한다, 이 원리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스르고 계십니다. 향후 1년 동안 어떠한 혼란이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란이 있을 것만은 분명히 압니다.

1년 후에도 다수당이십니다. 1년 후에도 대통령 임기 중입니다. 그것도 초반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초반에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원래 1년 차에 높고 2년 차부터 위태로워집니다. 1년 차에 할 일을 다 하자, 동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안한 원 플러스 원, 한 달 정도 토론하고 한 달 정도 여유기간을 더 가져 본다, 그래 봐야 11월입니다. 금년도 정기국회 내입니다. 예산결산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도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예산에 조치할 것은 또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빼셨지만 금융정책 기능 개편 포함해서 경제조직은 어차피 당초 부칙에 내년 1월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제가 봤었습니다. 즉 검찰청은 폐지지만 1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경제부처도 한 5개월 정도지요, 사오 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걸 예고하신 겁니다. 결국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법 시행 유예기간은 세세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은 맞는데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깜깜이

로 정부조직을 해 놓고 간판만 걸어 놓고 통과시키는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뭔지 정도 투시도나 설계도 정도는 있는 상태에서 기존 조직을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조직을 없앤다?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공직자 사기 문제가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일방 통과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그래도 제안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빨리해서 합의가 잘되면 한 달 후에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가면 그래도 한 달 정도 더 갖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간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제안드리겠습니다.

검찰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소개드릴까 합니다.

세계일보에서 정리한 기사인데 지금 제가 기사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토론이 너무 짧다 보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우당탕 가니까 이게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무슨 민주당이 추진, 새 정부가 추진하는데 발목 잡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에서도 얼마나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보는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 귀 닫고 입 틀막하고 가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사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의 기사입니다. '검경 핑퐁 수사 심화에 재판 지연 우려까지…… 느슨해지는 법망(심층기획-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으로)' 딱 이렇게 헤드라인이 뽑혀 있습니다. 제가 핑퐁 얘기 지어낸 게 아닙니다.

'국민이 경험할 새 형사·사법 체계. 문 정부 수사권 조정에 기관 책임이 모호하다. 여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에서 수사가 6개월 초과한 사건이 2배가 늘었다. 중요범죄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우려도 있다. 불완전 수사 뒤에 기소하면 법원의 부담은 폭증한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생긴다', 기사의 주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평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권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검찰개혁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15일 법조계에서는 제대로 된 설계 없는 형사사법시스템 변경은 자칫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대로지요. 저 이 기자분하고 연락해 본 적도 없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문제가 심화해 애꿎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기계적 기소로 이어질 경우에 현재 2~3%에 불과한 형사사건 무죄율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커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 견해하고 아주 동일한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자분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누적시키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칫하면 분풀이식 아니면 가족을 사랑

해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폭력형 개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와 수사, 분리하시자고요. 그런데 분리하면 핑퐁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이미 기사에 날 정도로 언론이 다 추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1년 동안 공부해서 오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 1년이 잘됐으면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경찰은 2022년 혈중 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음주 측정 당시 경찰이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문제를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6월 8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즉, 요약해 보면 2022년에 알코올농도 0.08의 음주운전자가 입건이 됐는데 경찰이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피의자가 이걸 제기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어떤 이유인지는 안 나오지만 6월 8일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완수사를 통보한 건 9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15일이었다', 즉 이 대목은 이거지요. 검사가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경찰이 9개월 후에 사건을 보완수사 결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한 담당 검사는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음주운전자가 있어서 경찰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했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는데 9개월 후에 보완수사 결과를 들고 왔고 그것도 충분치 않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여기까지가 전개입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돌연 2024년 2월 송치 결정을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해 사건을 종결했다'. 어? 이게 22년에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 수사하고 보완수사 요구하고 9개월 걸려서 다시 검찰이 받아 보고 다시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한 1년 좀 안 되네요. 1년 좀 안 됐는데 이제 검찰로 돌아올 타이밍인데, 순서인데 그렇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이 바꿔버렸대요. 이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기사의 맥락으로 봐서.

또 이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2024년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이었다. A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작은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명확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이든 절도든 사기든 살인이든 수사는 지연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견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떼는 건 좋습니다. 떼는데 서로 이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컬래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삼 년씩 끌면서 핑퐁하고 결국 경찰과 다른 결론이 나오고. 저는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이 뽑아 주셨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 편입니다.

이제 기소·수사 분리하고 좋은데요. 이게 핑퐁 문제 터지지 않게 보완수사 요청권 혹

은 수사지휘권,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열어 놓겠습니다. 어떤 명칭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기관 간에 사건이 핑퐁되고 지연되고 유실되고 왜곡되고 은폐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기사를 좀 더 읽겠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2001년에 폐지됐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핑퐁이 시작됐고 검찰에 총 사건의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1년이지요. '그러자 경찰은 수사가 미비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을 돌려보내는 핑퐁 현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이게 핵심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다 이것은 반사적인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가 미비한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또 수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검찰은 당연히 재송부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휘체계가 없으니까 결국 왔다리 갔다리 핑퐁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 이후에 벌어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2021년 이후에 누적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다, 이것은 직접수사권 없애기 위한 것이지요. 저는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요구 자체를 또 폐지한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어도 지금 핑퐁 문제가 생기는데, 큰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복구가 돼야 되고 그것이 명칭상 문제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좋은 명칭을 찾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이십니다—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 끝이라 생각하고 검찰은 자기 사건이 아니라며 수사기관 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개혁안이 이게 실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 설립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을 이렇게 대충 만들면 모든 사건을 서로 미루는 핑퐁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사건 초반에 증거를 빠르게 취해야 하는데 수사기관끼리 싸우는 와중에 증거가 다 인멸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예원 변호사님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이신데 저는 이분 만나 본 적도 없습니다. 저랑 견해가 완벽히 일치하고 오히려 현장의 우려를 담아서 저보다 더 생생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또 핑퐁게임을 넘어서 혼란게임도 경고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건 초반에 증거를 빠르게 취해야 하는데 수사기관끼리 싸우는 와중에 증거가 다 인멸될 위험이 있다,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쟁이 있는 것도 잘 아시지요? 공을 세울 만한 중대사건, 큰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수사기관 간에 다퉈서 여기에도 선택과 집중, 양극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이라는 지휘체계를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부패·경제 범죄 등 검찰이 수사 전문성을 가진 중요범죄 사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

려도 제기됐다', 이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부패나 경제 범죄 사건처럼 검찰이 그동안 좀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라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저희 동료 의원이시네요. 곽규택 의원님은 제가 잘 알지요. 곽규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6개월 초과한 사건 비율이 사기범죄는 2020년 11.8%에서 24.8%로 2배가 넘게 늘었네요. 횡령은 8.8%에서 14.9%, 배임은 20.5에서 50.2, 다 2배 가까이 혹은 2배 넘게 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동안 사기, 사기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는 알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요, 사기. 횡령, 횡령은 회삿돈을 떼어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것 다스리지 않으면 회사도 안 되지요, 공금횡령 뜻하는 거니까. 배임, 배임은 뭐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결국은 맡긴 임무를 배신하고 다른 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다스리지 않으면, 배임죄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배임죄 이것 잘못 형해화시키면 주식시장 무너집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게 돈 지키는 데인데, 지금 채널링 문제 이런 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회사 내에 재무 규율이 서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것.

그래서 금고지기가 금고를 지켜야지 금고지기가 빼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 은행에서도 횡령 사건, 배임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창구 직원이 어떻게 어떻게 돈을 뺐다, 뭘 했다 이런 문제 터질 수 있는데 그것 다스리는 게 횡령죄, 배임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저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생을 위한 죄목들인데, 이런 것을 그동안 경찰보다는 검찰이 많이 해 왔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내에 잘 처리되는 게 좋은데 6개월을 넘어서 오래 처리한 그런 사건의 숫자가 2020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2배, 2배 넘게. 즉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 일을 무조건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얘기 절대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저는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계속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과 서민들, 민생경제에 피해가 생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 매연이 심하니까 자동차를 없애자, 아니지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집에 불날 수 있으니까 아예 가스레인지를 없애자, 그게 아니지요. 인덕션으로 바꿔야 되는 거겠지요. 이렇게 부작용이 없고 문제를 치유하는 해법을 해야 되는 거지.

수사·기소 분리까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기는 핑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핑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무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고민하겠다. 고민 당연히 하셔야지요. 고민 안 하면 큰일 나게? 당연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설계를 어느 정도 해 놓고 구조직을 폐쇄해야지 지금 이렇게 신조직을 전혀 설계를 안 해 놓고 구조직부터 한다, 이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조직을 설계하는 데 시간이 1년 걸릴까요, 2년 걸릴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만 토론해도, 지금 대한민국에 법률전문가, 사법전문가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가 여기 잔뜩 가져왔는데 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세계일보가 취재한 이 기사만 해도 바로 문제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달 정도 논의하고 필요하면 한 달 정도 더 더해서 추가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목 잡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면 기소 이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검사들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러면 유무죄 판단에 대한 법원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게 벌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지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 수사가 불완전한 상태, 완벽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검사들도 시간에 쫓기고 계속 늘어지고 이것 내 사건 같은 애정도 약하고,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기소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도 불완전해, 검찰의 보완수사도 불완전해, 그러면 그게 결국 누구한테 부담이 갑니까? 이것은 자연히 법원에 부담이 가는 것이지요, 판사님한테.

'양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면 공판 자체가 최초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건 발생 후 6개월 있다가 재판하는 것과 사건 발생 후 2년 뒤에 재판하는 것은 증인의 기억이나 진술 등에 질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무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것 굉장히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보완수사,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이 부실하게 해요. 검찰에 넘어갔는데 이것 뭐 내 사건도 아니고 등등 어쨌거나 또 보완 요구를 요청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해요. 그사이에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사건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건이 발생한 6개월 이내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진행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사법전문가가 아니래도 너무나 납득이 되는 상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변호사, 기자, 전문가들이 다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더하기 한 달 정도라도 토론해서 이런 문제를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혹시 검찰 전체 사건 평균처리 기간 이 그래프가 준비됐나요? 됐으면 화면에 하나 좀……

이게 기사에 나온 그래프인데 검찰 전체 사건 평균처리 기간이 쭉쭉쭉쭉 계속 늘어 가다가 폭증하는 기점이, 2021~2022년 사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폭증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하시자고요. 하시는데, 저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빨리 토론해서 연말에 같이 통과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 제가 합격점 드린 정부조직 건들 있지 않습니까? 과기부총리라든지 지식재산처라든지 산업안전차관 신설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통과시키자고요, 정 급하시면. 그것은 제가 봐도 큰 논점은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상임위 토론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헌법적 결례입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저희가 성실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의껏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 뭐하다면

저희는 그것은 통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렇게 폭증하는 그래프를 그대로 두고 추석까지 검찰청 폐지를, 간판 떼는 것을 선물하겠다? 이 말에 기속을 느끼시는 겁니까? 저는 그 말을 기다리는 국민들도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밀하게 알리고 그 시점을 조율한다면 그분들이 그걸 왜 뭐라 하겠습니까? 괜히 정치인들이 자기 말에 갇혀서 국민들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눈감고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발목 안 잡습니다. 저런 문제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어서 조금 더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수사 주체와 재판에 서는 검사 간 소통이 단절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판부에서 근무한 한 검사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제사건에서 재판 전 증거기록을 모두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누구를 추가로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할지, 증거의 어떤 부분이 어떤 증언과 결합했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직접 증거수집을 하거나 대면조사를 해 본 사람밖에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이후에 형사재판 기간이 과거보다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이에 더해 미국처럼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에 세워 피고인의 유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모습도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목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혹은 중수청이 하고 그다음에 기소는 공소청 간판을 단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러면 수사를 한 사람과 기소를 해서 재판에 서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요. 공소청의 검사가 재판에 가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수사를 한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검사들 일해 보신 경험으로 보면 경제사건 이런 건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이게 직접 수사를 해 보거나 증인을 대해 보거나 자료를 보지 않으면 보완수사를 어디로 얘기해야 될지 그런 것 감 잡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없앤 이후 형사재판이 과거보다 늘어났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가서 증인이 신문한 신문조서가 있는데, 피의자나 참고인이 갔어. 그게 재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 과거에는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됐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한 증거 유도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증거능력을 문재인 정부 때 없앴는데 그 이후에 재판기간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처럼 이제 검사가 증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수사한 경찰도 불러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대목은 수사·재판이 지연되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점으로 나왔지만 저는 기사의 이 대목에 대해서는 완벽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또 거기서 불가피한 문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기 때문에 서로 객체화되면서 세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생겨요. 그런데 기소를 하는 검사가 세세한 문제를 판단하지 않지만 일단 경찰이 계속 능력 발전을 시켜서 수사를 전문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것은 경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것 자체를 위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안 한다 하면 수사·기소 분리를 영 반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지금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진 것 이것은 인권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면서 재판이 또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처럼 경찰관을 부르고 범인을 불러서 검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판중심주의로 가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진풍경이 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 중에 치유되지 않는 문제는, 시간이 오래 가고 핑퐁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검사 출신 변호사·기자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벌써 다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토론을 한번 하고 가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야 관계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저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걸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저희들 역할은 충실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검사는 수사 쟁점에 대해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 수십 명을 써서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면 그제야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검사가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겠나. 피고인은 결국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당히 예리한 지적인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건이 지연된다, 민생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고도의 지능형이고 힘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차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지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검사가 보완수사도 못 하면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검사는 수사 쟁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것, 아까랑 일맥상통하지요. 기소·수사를 분리하면 수사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검사의 능력이 떨어졌을 때 경찰이 더 잘하면 되지요. 물론 더 잘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 수십 명을 사용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면 그 변호사들이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어 가지고 서류와 증거물들을 그제서야 내고 이렇게 하면 검사가 대응할 시간도 없고 결국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간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수완박 하는 건 좋습니다.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 같은 체계를 잘 설계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개 나오지만 결국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이 두 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설계를 조합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무조건 배제한다 식으로만 해 놓으면 이런 문제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묻고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무찌르고 가자는 건지 거기에 대한 토론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론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토론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다시 다른 기사를, 이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문가들이 다각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지를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관점을 바꿔서 최근에 민주당에 의해서 불거지고 있는 사법부 괴롭히기, 대법원장 사퇴 압력, 탄핵 언급 등등과 연계된 민주주의 문제를 다룬 기사를, 시평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도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지 못해서, 정치를 회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고 민주주의 퇴행 속에서 이걸 일주일 만에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 꼭 소개할 만한 기사를 소개드립니다.

이게 정치학과 교수님이 쓰신 건데 교수님 존함은 기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실 거고,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방법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한 정치인들이 모여 창당한 1955년의 민주당을 그 기원으로 삼고 있다. 그 이후 그 당의 명칭은 정치 상황에 따라 수없이 바뀌어 왔지만 민주라는 단어는 열린우리당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언제나 정당의 이름으로 유지해 왔다. 그만큼 민주당 계열 정당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정당의 핵심 정체성이자 가장 소중한 정치적 명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지만 잘 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우려가 되는 까닭은 세계 여러 곳에서 민주주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을 겪은 나라에서 나타났던 현상들과 놀랄 만큼 비슷한 현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칼럼을 써 주신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이 기사에서는 언급 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이고, 그냥 다수당도 아니고 절대 다수당이고 그것도 21대 국회, 22대 국회를 거쳐서 계속 다수당이시고 거기서 민주당이 폭주하신 모습들이 그냥 민주당의 폭주가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 퇴행이 나타났던 다양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징후와 현상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퇴행한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보다 사법부에 대한 공세이다. 한 정당이 선거를 통해 의회 내 압도적인 의석과 강력한 행정 권력을 장악하면 그 힘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 이러한 공세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늘리고 그만큼 자기편으로 임명하는 방식,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나 사법부를 공개 비난하고 사법부 신뢰 하락을 명분으로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변경해서 별도의 법원을 만들거나 판사의 임명이나 평가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를 비롯한 민주주의가 퇴행한 많은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제가 사실은 베네수엘라나 이런 사례를 소개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크게 봅니다. 높게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높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저는 지켜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의

직분을 맡고 있는 한 경고드리고 저항하고 경계하고 지적하고 투쟁할 지점은 투쟁해야 합니다.

이 교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의드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에 공개적으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미, 튀르키예, 헝가리에서 비롯된, 거기서 시작됐던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놀랍고 이상하고 기묘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사법부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대법원장을 늘리고 판사를 흔드는 방식, 이 방식이 대한민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특히 다수당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장악하면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기존 법원을 우회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 대법관 증원과 정당 추천 인사에 의한 판사 평가 추진 등이 충격적이라 할 만큼 모두 이들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이들 정권은 실패한 쿠데타나 경제·안보상의 심각한 위기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 또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노골적 억압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 등의 형태로 언론을 규제하려는 방식까지도 비슷하다'.

이 대목은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이런 것을 헌법에 반해서 만들려고 하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일방적으로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편파적인 증원을 하려고 하고 판사를 평가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놀랍도록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나라 등에서 판박이로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나라들은 실패한 쿠데타나 경제·안보상의 심각한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 또한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제가 정말 통탄할 것은, 제가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반성과 성찰로 시작한 겁니다. 저희 당의 문제, 저희 여당의 문제를 저희는 짐작조차 못 했고 결국 정권을 잃어서 정국을 이어 가지 못했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2월 3일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을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내란몰이, 정치적 몰이를 넘어서 이제 사법부를 흔들고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퇴행했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패턴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교수님은 명시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과거에 민주주의는 군부 쿠데타나 대중 폭동과 같은 격렬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붕괴됐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몰락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쓴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표현대로 점진적으로, 감지하기 힘들게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만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사법부를 자기편에 유리하게 재편하겠다는 민주당의 시도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저희 국민의힘이 경고드리는 헌법적 위기와 아주 궤를 같이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거칠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동일합니다.

저희를 내란당으로 자꾸 부르시는데 저희는 계엄을 몰랐고 계엄 이후에 헌법적 통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헌정을 문란하게 하면 헌란당이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균형감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란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인지합니다. 그러

나 저희는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 문란, 헌란당의 덫에 지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경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드리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 임무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동안 이미 제왕적이라 불린 대통령에 단독 입법과 단독 예산안 처리, 공직자 탄핵까지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막강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까지 장악한 정당이 사법부마저 사실상 통제하게 되는 상황을 두고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런 방안들이 정말로 민주당의 뜻대로 다 입법화된다면 머지않아 V-Dem이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 등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기관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사과와 반성을 드렸듯이 저희가 계엄을 예단하지 못했고 계엄 이후의 정국 관리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뉴스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가는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내란이 아직까지 진행된다는 논리, 내란을 아직도 청산해야 된다는 논리, 수사하십시오. 슈퍼 특검 열렸지 않습니까. 사법은 사법에게 맡기고 정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듯이 지금 계엄·탄핵·특검 뉴스 밑에서 은밀하고 내밀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 경고를 드리는 건 저희의 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기술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요즘 유튜브에 너무 갇혀 있고 한줄뉴스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은 성찰과 반성의 길 걷고 있습니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건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이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든 또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든 그러한 조치들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는 이들 기관이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 입증될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이뤄 냈다는 우리의 자긍심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의 문화·외교·경제적 위상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후퇴와 국격의 실추는 결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역사의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로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볼 때 과도한 권력 집중의 시도는 언제나 국민의 큰 저항을 불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개막식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정치학자들 앞에서 K-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제도 간 견제와 균형이고, 특히 사법부와 언론 등 심판기관의 제도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확립되어야 하

는 것이다.

민주당도 오랜 세월 그들이 소중하게 유지해 온 민주주의 수호라는 그들의 정치적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큰 위기로부터 어렵게 되살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제도적 자제와 신중함이 필요해 보인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빛의 혁명으로 승화시켰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정국 과정에서 보여 주셨던 헌법적 파행,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저희의 사명이었고 저희는 그것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헌법적 통제의 과정을 이제 내란정당 몰이에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우려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정치적 공격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저희가 벗어날 것이고 저희가 재건할 것이고 저희가 걸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민주당과 정부입니다. 저희는 107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견제집단이고 지금 운전대는 170여 석을 지휘하는 민주당과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대통령께 있습니다. 왜 정부조직법을 열흘 만에 통과시키십니까?

제가 이제 갓 4시간 정도 세세하게 논점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열세 개에 걸친 중폭, 중형, 중대형 정부조직 개편이고 그중에 검찰, 경제부처, 기후에너지, 핵심 기능들을 손대는 겁니다. 어떻게 열흘 만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왜 열흘 만에 해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고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것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민들은 헛갈리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흥분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격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치의 한가운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할 때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인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것은 정권을 잃은 것보다 정권을 잃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열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 일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 한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갈라졌고 분열했는데 저희 정치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런 점을 반성해야 되는데 그 분열 속에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흥분하신다면 지금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있고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단편적으로 대하시는 한줄뉴스나 유튜브 쇼츠보다는 저희가 돌아가는 내막을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년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상당히 헛갈렸습니다. 카톡 문자, 문자 폭탄, 유튜브 거기에서만 보는 정보들은 상당히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좀 중심이 서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잃은 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실수와 저희의 실패로 인한 정치적 반사이익은 누가 받으셨습니까? 피해는 국민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반사이익은 민주당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혼란을 끝내고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시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경청과 통합,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정부 3대 국정원칙에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경청과 통합입니다.

열세 꼭지의 정부조직법을 10일 만에 바꾸는 것이 경청의 자세입니까? 3대 국정원칙 첫 번째 맞습니까?

또 하나 읽겠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가 실수해서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생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통합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조직법 열세 꼭지를 툭 던져 놓고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처리하자, 열흘 만에 처리하자, 이것은 통합의 정치입니까? 이래서 국민들이 통합되겠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이 단상에 서면서 내란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란인지 계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사법부를 그대로 두십시오. 사법부를 건드리면 문제는 불거지고 재판 결과의 신뢰성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판부 기피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편하면 그것을 쓰면 되는 것이지 위인설관의 재판부를 만드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즉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 첫 번째와 정확히 배치됩니다.

부의장님,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토론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의원 생활했던 경험에 대해서 소회를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 보는데 제가 해 보니까 이 단체전이 좀 힘듭니다. 개인의 소신도 있지만 또 저희가 정당에 소속해서 정당의 전략을 관철해야 할 때 개인행동을 할 수가 없고 소신도 삼켜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제가 와서 느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좀 갈등이랄까요,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소화해 가고 있습니다. 단체전도 명분이 뚜렷할 때, 승산이 뚜렷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에 좋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과감히 무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지난 1년간의 경험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을 이렇게 개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무제한토론드리는 것, 저희 당의 방침이지만 저의 소신에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온 겁니다.

혹시 슬라이드 띄워 주실 수 있으면 다시 띄워 주십시오.

합격점들이 있습니다. 상임위 토론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저희가 국민께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있지만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것,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과기정통부를 부총리로 만든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차관을 만든다, 중소벤처부에 소상공인차관을 만든다,

이견이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헌법적 정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상임위 토론 등을 거쳤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저희 당이 시켜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국회의원 돼서 뭐 그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나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꾼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방통위가 얼마나 시끄러웠고 정치적 논쟁이 컸고 파행됐던 기관입니까? 이것 누가 봐도 이진숙 위원장 내려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저한테 얘기하시든지요. 저는 뭐 생면부지이지만 이진숙 위원장 찾아가서 제가 사퇴하라고 설득을 해 보든지 새 정부가 들어서서 통치철학에 맞춰서 이렇게 정무직들을 바꾸겠다, 그것은 차라리 논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기술을 발휘해서 조직을 바꿔 가지고 사람을 쫓아낸다?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불편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방법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퇴장이라고 아예 표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씩 보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랑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그다음에 밑에 하나 아래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이거는 굉장히 과거 회귀적이기만 하고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기획예산처가 작아서 문제였다니까요. 그런데 더 작게 만드시는 것이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이 없어서 붙여서 만든 게 금융위인데 그것을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 가고, 재정경제부는 예산이 없어서 조정 기능이 없었는데 그냥 다시 예산이 없는 재정경제부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는 듣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가 찬성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 제가 저희 당 정책국이나 여기랑 일일이 상의 안 했습니다. 제가 그냥 소신껏 판단해서 합격은 합격이고 낙제는 낙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부처는 다 재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안 끌 테니까 빨리빨리 해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괜찮고 거기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조금 더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 저는 그런 말씀이고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바꾸는 것은 이것 굉장히 예민하게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기가격 뛰는 것, 이것 굉장히 대한민국의 큰 숙제 아닙니까? 올해 여름에 도심 39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추우면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인류의 문명이 전기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하느냐? 실수하면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좀 체크를 해 보십시오. 탈원전 잘못했다가 원전 복구하느라고 난리 났었다는 것 아닙니까? 호기롭게 이름은 너무 좋아요, 기후에너지부. 그런데 이름이 좋다고 결과가 좋을 수 없다.

그리고 더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독일과 영국에서 실패 사례가 이미 다 있었다. 에너지는 안보로 전환했고 기후는 기후대로 관리하고. 저는 그것을 따라가자는 게 아

니라 그전에 유럽이 그렇게 실수했던 지점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유럽이, 영국과 독일이 기후환경부, 기후에너지부 이런 것 하다가 안 되니까 기후안보부로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두고 차라리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그림에 쓰지는 않았지만 에너지부를 하나 독립시켜 보시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해요.

저희가 장관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게 큰 비용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 또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 때문에 에너지는 보통 중차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전은 10년, 15년 걸리니까 해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해야 된다 이런 발언 하셨는데 그것 누가 인풋 주셨는지 그런 인풋 주시면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들여온 원전을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전기 켜고 사는데 10년, 15년 후의 일일수록 더 빨리 착수해야 되고 더 중차대하게 해야 되고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늘리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계통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지만 그것은 극복해 가야지요. 그것 좋은데, 지금 기후에너지부로 넣게 되고 장관이 환경부장관이고 에너지실이 들어가고, 에너지실은 공급 기능이고 환경부는 규제고, 공급이 규제되지요. 그러면 전기 부족합니다. 그러면 전깃값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금 다 올려놨지 노동비 올랐지 규제 높았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큰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후에너지부 만든다? 반대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채점 거부라고 쓴 겁니다. 채점할 게 없어요, 그냥 간판만 바꿔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실만 쏙 빼 갔어요. 거기 보면 자원 개발, 석유·가스 개발 이런 것은 또 뒀어. 원전 수출은 줬어. 그런데 에너지실만 왜 쏙 빼 갔을까? 전력기본계획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의 수요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력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빼 갔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것 빼 간 것도 좋고 신재생 늘리는 것도 다 좋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후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규제 부처에 집어넣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전력기본계획 바꾸는 것,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문재인 정부 때 다 해 봤지 않습니까? 그냥 신재생을 늘린다고, 확 지른다고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채우면 또 뭐 합니까.

지금 제주도는 신재생으로 자립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의 경험치를 저희가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잘되고 뭐가 못되고. 그런데 또 데이터센터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러면 남해안을 신재생으로 한다? 좋아요,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차분차분 시행착오 없이, 서둘러 가면 유럽처럼 백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독일 고생하시는 것 보십시오.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스까지 러시아에 의존했다가 아주 제대로 걸린 거지요. 독일은 에너지 문제를 잘못 다뤄서, 지금 제 느낌에는 미국, 중국 그다음 국력의 순위로 독일 정도, G3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나라인데 독일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큰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차라리 독립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허청, 과기정통부는 제가 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통위는 헌법의 이름으로 퇴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가부는 성평등부라고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본다면 예민하게 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헌법에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사회적 이슈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굳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과감히 다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 상당히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냐 걱정합니다.

그리고 검찰청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다 찬성드리고, 핑퐁 문제 그리고 신조직을 세우지 않고 구조직을 폐지 결정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과정 관리의 불안 문제, 그게 무려 1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 어디 가셨네. 제가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렸었어요. 그런데 답이 1년 시행 기간 동안에 뭐뭐뭐 특위에서 잘하겠다 이렇게 딱 두세 줄 오셨어요. 답을 짧게 주신 건 좋은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더 준비를 하셨을 텐데 밝힐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지금부터 잘하시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국회에서 한두 달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소거할 정도의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 거부를 했고.

하여튼 낙제가 네 건이고, 합쳐 보면 퇴장 한 건에 채점 거부 세 건, 합격도 다섯 건 있어요, 총 열세 건 이렇게 줬는데. 그리고 제가 아예 관점이 부족하다 추가한 것은 인구 문제 이것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조직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지금 대미 협상서부터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상대하는데, 전 세계를 상대하는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외교부를 국무부 정도로 만드는 것,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은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발하시고 야심 차게 하시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고.

저희는 지금 이런 그림에 붙여서 떼었다 붙였다 하지만 공무원 사기가 바닥입니다. 제가 93년에 경제관료로 사무관서부터 열심히 했는데 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선배·후배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는데, 공직을 떠났는데 이 공직의 사기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공직자 동료·선후배, 지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개발연대 시대의 그런 관료집단,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다 직장인이고 생활인이고, 그들의 동기와 경력개발과 인생의 문제를 관리해서 그들이 일을 더 잘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는 그 책임, 그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1차 책임 대통령이고 2차 책임 여당이고 3차 책임 저희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맨날 감사하고 징계하고 그것은 정말 정말 발달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사회도 정말 투명해졌고 절차화됐고 요즘 새롭게 들어오는 2030 공직자들 보면 정말 선진국 공무원답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람보르기니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공직자들이 의욕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사기 문제는 이 모든 조직 개편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한 차원 높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런 고민의 흔적은 일언반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입니

다. 저희가 국정을 이어 갔으면 정말 다룰 문제였는데 그 지점이 너무 죄송하고 한탄스러울 뿐인데, 이제 이어받으셨으니까 잘해 주시길 기대하고 이것을 읽어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민주주의 퇴행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건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찰리 커크라는 보수운동주의자 젊은 분이 암살을 당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칼럼이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이렇게, 이것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다 결국 극단의 정치인데 그 칼럼을 써 주신 분이 있는데, 주필께서 써 주셨네요. 한번 소개드려 보면서 이어 가겠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경계하며. 찰리 커크 암살의 원인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보수와 진보 극단적 대립, 검찰 해체, 특별재판부 등 위헌 논란을 무시한 여당의 강행, 정치 살릴 길은 국민들의 각성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폭력과 살인은 날이면 날마다 최대한 증오감을 부추기고 경멸적인 방법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온 데 따른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메시지의 일부이다.

전날 암살된 보수주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만은 동의한다. 커크는 2012년 18세의 나이에 터닝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즉 찰리 커크 암살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메시지의 일부를 소개하신 건데요. 그 내용이 '폭력과 살인은 날이면 날마다 최대한 증오감을 부추기고 경멸적인 방법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해 온 데 따른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한 건데 이게 저희 국회의원들이—저 포함입니다—잘 새겨야 할 대목으로 잘 시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이어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 작은 정부, 정부의 재정적 책임 등 보수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이민자·낙태·동성애 반대 등과 결합하며 일부에서는 그—찰리 커크—를 극우로 낙인찍기도 한다. 22세의 타일러 로빈슨이 커크를 암살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탄피에 새겨진 안티파(반파시스트 운동) 문구 등을 보면 로빈슨이 커크와 반대되는 이념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대를 극우 혹은 극좌로 낙인찍는 극단적 대립이 비극을 낳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수·진보 혹은 좌파·우파의 대립이 최근 더 심해진 이유는 극단에 대한 보상이 과거보다 커진 데 있다고 한다.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치인은 거의 없다.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후원금과 지지 메시지가 쏟아지는 경우는 상대에 대한 극단적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을 때이다. 소셜미디어, 팟캐스트, 유튜브 등 매체는 관심이 곧 돈이다. 극단적으로 편향되고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 분노와 증오를 부추길수록 구독자와 조회수, 좋아요가 늘어나고 이는 곧 수익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는 왜 극단에 몰리는가? 캐스 선스타인은 인터넷이 되레 불통과 극단주의를 부추겨 음모론과 증오를 확산시킨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들어맞는 토론방을 검색하고 선택한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토론방은 떠난다.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고는 극단화된다'.

최근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SNS 미디어에 의한 정치 양극화 현상, 극단화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마 1년 전이었으면 제가 이 기사에 그렇게 눈이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나니 제가 이 기사가 정말 눈에 들어옵니다.

중도적인 노선, 그것이 무슨 노선이든 합리적인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책임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극단적인 발언 자극적인 발언이 더 중요하다, 강성 지지층에 충성하고 호소하는 것이 돈이 되고 동시에 정치인의 보상으로 돌아간다, 성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극단화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저는 이 지적을 받아들일뿐더러 이 지적을 더욱 증폭해서 저희가 경계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극단화돼 있고 처음은 저희가 지지층에게 주장하고 지지층에게 어필하지만 그것이 지지층의 선동으로, 자극으로 저희를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일을 다뤄야 되고, 객관적인 노선을 저는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맞는 일이면 극우, 극좌, 중도 무엇이든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단이 위험하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다루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에 해당합니다.

제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 스스로 분석해서 제안드리는 이유입니다. 합격시킬 것은 합격시키고 퇴장시킬 것은 퇴장시키고 낙제점을 줄 것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제점을 받은 것도 저는 대안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좋습니다. 검찰과 수사를, 기소를 분리하시지요. 좋은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핑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조직을 새집을 짓지 않고 기존 조직을 폐쇄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가 요청해야 되는 민법상의 후견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한 달간의 토론이면 저희가 충분히 다룰 수 있고 부족하면 한 달 더 하면 됩니다. 자극적으로 반대해서 인기를 끌기보다 저는 합리적으로 대안도 드리고 비판도 합니다. 그러니 받아들여 주십시오.

정치인이 인기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좇아서 도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추석 밥상, 추석 버스 거기에 검찰청 폐지를 올리겠다, 그런 말씀을 아마 민주당 당대표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에 포로가 돼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 말을 기대하시는 지지자분들도 지금 이런 졸속적인 품질 낮은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잘하라는 뜻이지, 추석까지 잘하라는 뜻이지 추석까지 대충하라는 뜻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찰리 커크 암살을 계기로 본 극단화된 미국의 비극이다. 극단에 대한 보상이 과거보다

커진 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 절대다수 의석과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청 해체를 목표로 폭주하고 있다. 검찰 없으면 나라 망하냐는 막말로 검찰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는 국회의원도 나온다. 일국의 대법원장에 대해 가짜뉴스를 들이대며 수사받으라, 사퇴하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숱한 경고에도 여당 입맛대로 특별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인다. 모처럼 협상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낸 여당 원내대표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질타가 쏟아지고 당대표와 대통령까지 몰랐다며 손절하는 촌극이 벌어진다. 정치무당이라는 별칭을 가진 유튜버의 영향력은 대통령을 능가한다는 믿기 어려운 말이 떠돈다.

써 놓고 보니 이상하다. 강성 정치인, 음모론자 유튜버는 국민을 떠나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닌데 말이다.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내고 저질 유튜버에게 후원을 하는 게 곧 국민이 아닌가 말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한 편집적·선택적 뉴스 청취 그리고 그런 경향이 강화시키는 국민들의 분열, 갈등 그리고 이 일반적인 현상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라는 주필의 논설입니다.

저는 대단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추가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흥분하실 수 있습니다. 격분하실 수도 있고 국민들은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과 흥분과 격분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것은 저는 국회와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흥분했을 때 더욱 선동하고 국민들이 불안할 때 더욱 자극하고 국민들이 격분했을 때 더욱 강화시키는 것, 저는 그 현상을 지난 1년 경험했습니다. 목격했고 관찰했고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대안을 가지고 있는 칼럼도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정치인이 선동하지만 선동된 지지자는 정치인을 포로로 만듭니다. 누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벗어나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그것에 갇혀서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어야 합니까? 저희 스스로 거부를 해야 되고 저희 스스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을 때, 자동차가 탄생하든 증기기관이 탄생하든 통신이 탄생하든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을 때 사람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혼란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아마 전 세계적인 알고리즘의 분열 현상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겪어보니 정치는 국민들을 분열시킬 정도까지는 아닌 정도로 싸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켜도 차분하게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여론을 양쪽으로 쪼개는 그런 식으로까지 탄핵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12월 4일, 12월 3일 그 비극적 선택이 있었던 그날 바로 다음 아침 날 제가 밝히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하야는 불가피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하야라는 작업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하지 않고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희는 그날 그 시점부터 대통령 하야를 결심하고 조용히 움직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준비되지 않고 뚫렸고

국론은 분열됐고 우리는 오늘의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상황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끝없이 확대·재생산되고 있고 이것을 누군가 고리를 끊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라도 조금 더 내막을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서 지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도리는 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가 양극화돼 있고 그것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증폭되고 있다는 추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믿기 어렵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면 민주당이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무한 순환의 악순환을 누가 어떻게 깨야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300명이 깨야 되고 300명이 다 시작할 수 없으면 저라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 자체적인 평가를 했지만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는데 낙제점이 있고 합격점이 있고 다 반대할 수 없는데 상세하게 한두 달 했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채점 거부라고 썼습니다. 오로지 하나 방통위원장 고치는 것은 헌법적 관행을 새로 쌓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안 돼서 퇴장을 명했습니다.

13꼭지 전부 다를 반대하는 것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이 정치 발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부 여당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안 하면 저희 국민의힘이라도 해야 됩니다. 전체가 다 할 수 없으면 저라도 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만 해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해서 대안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부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모델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서 토론을 출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작아서 문제였는데 더 작게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돼야 돼서 만들었는데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고 재정경제부는 조정 기능, 예산 기능이 없어서 기획재정부가 됐는데 다시 재정경제부로 만들고, 제가 얘기하는 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김대중·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걸어왔던 저희 헌법적 교훈입니다. 금번의 조직 개편은 거의 대폭에 가까운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잘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사를 조금 더 이어 가겠습니다.

‘찰리 커크 암살을 계기로 본 극단화된 미국의 비극이다. 극단에 대한 보상이 과거보다 커진 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 절대다수 의석과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청 해체를 목표로 폭주하고 있다’.

이건 제가 소개를 드렸군요.

이 부분은 드렸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타주의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커크 피격 사건 이후 이렇게 말했다. 로그아웃하고 컴퓨터 전원을 끄고 밖으로 나가 잔디를 가꾸고 가족들과 포옹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선행을 베풀어라. 조금만 바꾸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유튜브에서 눈을 떼고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싶다.

선스타인은 이종교배라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 집단 극단화가 원인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동질성이 강한, 이른바 라이벌이 아닌 사람들의 팀으로 구성됐다. 반대 의견은 충성심 부족으로 간주됐다. 특정 사고를 공유하는 집단이 의사결정을 좌우할 때 생기는 전형적 정책 실패이다.

반면 링컨 대통령의 성공은 건강한 라이벌들의 팀 덕분이라고 선스타인은 강조했다. 링컨은 자기 생각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집단 극단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총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로 안도할 때가 아니다. 내 속에, 내 집단 속에 움트는 악마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줄지 말지도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각성이 중요하다'.

취지가 아주 명료한 칼럼입니다.

발목 잡기가 아닙니다. 통과시킬 부분, 큰 우려가 없는 부분을 통과시키십시오. 그러나 우려가 큰 부분은 보완하십시오. 실익은 없이 나쁜 헌법적 폐습을 쌓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170석에 이르는 민주당 권력이고 대통령 권력이지만 집단사고에 갇히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볼 때 이 집단사고에 갇히는 일은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집단사고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객관적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격할 점 합격했고 탈락시킬 점 탈락시켰습니다. 좀 챙겨 보십시오. 저희는 그룹사고에 매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는 문제가 있어서 정권까지 잃었습니다. 지금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길의 끝에 벗어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170석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운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경제부처는 불만이 있으시다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로 쪼개서 현재 버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합쳐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3개로 만드는 것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시고 새롭게 그려 보시면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하고 싶으신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영국과 독일에서 그게 철저히 실패했었다. 그러면 우리는 영국과 독일에서 실패한 기후에너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 감상에 젖어서 영국과 독일이 저질렀던 실패의 트랙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면 전깃값은 뛸 것이고 약해져 가는 대한민국 제조업 기반은 더 무너질 겁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한두 줄의 법안 문구로 우리는 지금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열흘 만에, 일주일 만에 상임위 토론도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부는 명백히 산중위와 환노위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얼마나 시각이 다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다른 시

각 속에서 에너지 공급과 환경보호라는 일을 각자 잘해 오고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뭉쳐서 짬뽕을 만들 때는 그만한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토론 다 생략하고 그런 자신을 가지십니까?

저희가 하는 생각이 다 맞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극단의 정치를 경계하며 이 칼럼을 소개드린 것은 저희가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아니 저는 빠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보수정당, 민주당 진보정당, 저희는 모두 집단사고, 그룹 사고 속에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벗어납니까? 여기 칼럼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벗어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정치인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진행되는, SNS에서 진행되는 정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조금 다르다. 조금 극단화되어 있다. 균형되게 볼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균형되게 볼 때, 가장 균형적으로 먼저 보고 실천하는 집단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각성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해야 되고 정부조직법에서 먼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짧은 칼럼 또 하나 제가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강성 지지층 포로가 된 여야, 협치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여당은 강경파 반발에 특검 합의도 파기했다, 야당은 아스팔트 우파 결집 행보에 나서서 우려된다, 내우외환의 시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취지의 사설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며 심각한 정치 실종 사태를 빚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이 파기되는 과정은 강성 지지층에 볼모로 잡힌 여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어제는 정청래 대표와 회동하면서 사실상 강경파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 줬다. 투톱, 즉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당 내홍이 봉합되는 수순일지는 몰라도 어렵게 이끌어 낸 여야 합의가 강경파 반발에 14시간 만에 뒤집히는 속 터지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어땠겠는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집권 여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마땅한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바로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드리는 이 정부조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서 동시에 3대 특검법 연장은 민주당이 대폭 후퇴하는 그런 여야 합의안이 진행되다가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다시 일방 강행 통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조직법 반대토론에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를 드려 보겠습니다.

특검, 저희는 반대합니다. 이미 검찰을 지휘하실 수 있고 경찰을 지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특검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떠올려 보시면 그 특검 출발할 때 언론이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그 표현이 '슈퍼 특검'이었습니다. 3대 슈퍼 특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 연장은 이미 슈퍼 특검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고 상당히 자극적이었지만 저희한테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한 달 연장되는 것 그리고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벌써 대전지방검

찰청 등등 검찰청 하나에 이를 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특검이 연장되고 수사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지금 철퇴로 이미 맞을 때까지 맞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뭐 늘어나고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여당의 모습이, 제가 그 협상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맞을 때까지 이미 다 맞았는데 특검 연장 그것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뭐냐? 그냥 더 하라고 해라, 지금 이미 맞을 때까지 맞고 압색 다 당했는데. 우리가 정부조직법 이것을 그냥 왜 덜렁 받아 주느냐?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한 정치적 명분은 통합이었습니다. 특검이 오래되고 협치가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통합될 방법이 있겠습니까? 특검이 한 달 연장돼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타격이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한 달이라도 국민통합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고 기왕에 출발한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바꾼다 하니 고민스럽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보려 저희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비난이 아니라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조직법과 특검을 바꿔 먹으면 되겠냐, 이런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여당이 후퇴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정부조직법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지지층을 비난하기보다는 저희가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지, 강성을 긍정으로 이게 저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저희 쪽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 쪽은 저희가 고쳐 가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야당이니까 저희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 여당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이제 균형을 잡아 주셔야 저희가 협치를 하든 뭘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치가 깨져서 정부조직법이 공중에 뜰 것 같으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강행 처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 필요하면 뭐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국가의 조직을 흔드는 거고.

제가 여기 객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잘한 것도 있으시다니까요? 이런 건 상임위 토론 한 번 거치면 딱 나이스하게 좋은 절차로 통과시킬 수 있으세요. 좋은 거 많이 하셨어요. 국가데이터처 잘하셨어요. 지식재산처 잘하셨어요. 과기부 총리 격상 잘하셨습니다. 산업안전차관 만드시는 거 잘하셨어요. 소상공인차관 만드는 거 잘하셨어요. 제가 판별사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감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다 좋아할 일이고 취약했던 기능의 보강이고 국가에 좋습니다. 다만 상임위 토론 한 번 안 했다는 절차적 옥의 티가 있는데 그런 정도 보강하고 통과시키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경제부처는 제가 아무리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 좋을지 국가에 좋을지 후손에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작아서 문제였던 기획예산처는 더 작게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로 부족해서 금융위원회로 보강한 건데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하고 재정경제부는 덩치만 크고 예산 기능이 없어서 기획재정부로 만든 건데 예산 기능을 빼내고, 그럼 뭐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자는 건지. 너무 급히 해서 옛날 기억으로 돌아간 흔적밖에 저는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대미 협상이 중요하고 인구문제 중요하고 이런 문제를 미래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본다면 경제기획원이 다시 탄생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금융을 따로 떼어 둘 게 아니라 붙여서 재무부로 가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의 시대와 보이는 손의 시대로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87년 헌법 체제 민주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했다고 봅니다. 왜냐? 관치 위주의 경제가 그때부터 민간 주도로 가기 시작했고 저희에게는 비극적이었지만, 너무 아픈 기억이었지만 외환위기를 통해서 민간 중심의 경제로 촉진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사이에는 경제기획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이 있었고 긍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만 갖고 조물딱조물딱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대미 협상부터, 무역 질서부터 다시 토론을 해야 되고 근원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 저희가 어떤 다문화 정책을 할지 아니면 로봇과 AI를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하게 토론되고 국가의 정책으로 축적돼 가야 되는데 그거는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개입주의가 필요한 시대고 미국이 이미 솔선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기획원, 미래기획원, 경제기획원, 어떤 이름도 좋습니다. 차라리 그런 걸 탄생시켜서 토론해 나가야 하고 그것에 모든 기능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재무부 정도의 기능을 따로 뗀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대안이고 제안입니다.

검수완박, 검찰과 기소의 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에 찬성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악연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가진 악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고 다 지나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미래에 무엇이 좋으냐입니다.

이미 불거진 문제는 수사 핑퐁의 문제입니다. 경찰청과 검찰청 간에 수사 핑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읽어 드린 기사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가 2배 이상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무한 반복되고 있다’, 벌써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폭증하는 시점은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1차 검수완박 시점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시자고요. 이번에 해야 되면 깔끔하게 하시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시자고요. 그런데 분리된 기소·수사권이 어떻게 일할 것이냐, 그 질서 체계는 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검수완박이 더 되면 저게 더 커질 텐데 결국 수사 지연의 피해는 누가 봅니까? 가장 힘없는 국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윤석열 집권하고 많이 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아니, 그때가 이제 딱 검수완박 시점 아닙니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2023년에 확 늘었는데요.)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그 교체기에 검수완박하신 그 시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뭐 조금 영향이 있는데 특수부 수사만 해 가지고 확 는 것 아니에요, 일반 사건.)

아니, 그러면 저는 그 말씀도 드릴게요. 특수부에 수사가 몰려서 다른 사건이 안 됐다, 그 유추도 당연히 해 봐야 되는 토론인데 저는 이런 토론도 드려 보겠어요. 그러면 특수부만 폐지하시면 어때요? 명의는 절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특수부가 지금 문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부나 공안부가 문제 됐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 봤거든요. 김동아 의원님 관찰과 걱정 이런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수부만 폐지하시자고요, 특수부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아니, 결정이 아니라 토론해야 되고 토론이 결정해야지요.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동아 의원님 주신 것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특수부에 사건이 몰려서 다른 게 지연된 것 아니냐, 당연히 점검해야 돼요. 저는 그것의 진의는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그렇다면 특수부를 폐지해야지요, 특수부를. 그게 저희 도리 아니겠습니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국힘에서는 경찰 특수부 능력 없다고 막 비난하시던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저희의 상황은 너무 급히 하셔서 저희 전체적인 의견 모을 수도 없었어요. 요즘 법사위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이것 토론 자체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정책위에서 별도 검토를 한다 하지만 저희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지금대로 하면 문제가 크다 이 말만 계속하시는 거고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반대하나 마나 약간 애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명히 말씀드릴게요. 검찰개혁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핑퐁 문제가.

제가 작년에 국회 예결위에 와 가지고 그때 법무부를 처음 만났지요. 법무부 만나서 제가 예산 얘기보다 이것부터 물어봤어요. '시중에서 난리다, 지금. 수사가 안 된다 그런다. 뭐냐?' 제가 한참 물었는데 이게 뜻밖에 대답이 너무 명쾌한 거예요, '핑퐁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수사지휘를 안 하니까 보내면 뭐라 할 수가 없고 그쪽에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수사를 해서 달라'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데드라인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냥 수사를 보내고 그러면 그쪽에서 수사할 만큼 하고 기소할 때 돼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이쪽도 이제 내 사건이 아닌 거야, 검사도. 내 사건이 아니고 경찰 사건 비슷한 거예요. 사건의 오너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또 오면 그때 하는 거야. 하다가 또 '부족하네' 그러면 이리로 가. 이게 핑퐁이 안 되겠습니까?

지역구 경험하실 거예요. 경찰, 교육청, 구청, 문제 하나 갖고 뱅뱅뱅 돌고 한꺼번에 결정하면 하루에 결정할 것 1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도 아니고 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검사 지인은 있어도 검사 만나서 심문 받아 본 적도 없고 악연도 없고 좋은 인연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니, 국회의원인데 국민 눈치만 보면 되는 거지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검찰이 가져왔던 폐해, 국민의힘도 심대한 걸 넘어설 정도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계시는 악연도 저희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고치자고요. 그런데 저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 윤호중 장관님하고 정성호 장관님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강행 통과되면 집은 안 짓고 간판만 달고 출발하시는데 저희는 걱정투성이고 그래서 반대드리는 거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 복안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 복안 저희한테 얘기해서 한 달 내에 좀 새집의 그림을 보면서 통과시켜도 되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아는 게 없는데 의심밖에 더 커지겠습니까? 추석 밥상에 올린다 그러더니 또 그것에 밀리는구나. 그러니까 극단주의를 경계하자고 제가 지금 기사를 계속 읽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인 해 보니까, 제가 1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단체전이 제일 힘들어요, 단체전이.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과 취향과 가고자 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빼박 아닙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또 당에 도리를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의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의 당론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전 국민이 정하는 겁니까? 미래가 정하는 겁니까?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정하는 겁니까? 강성 지지층의 단기적인 흥분이 정하는 겁니까?

만약에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리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것이면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조차도,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가 올라오시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조차도 잘 열심히 꼼꼼히 해서 추석 밥상에 올리라는 뜻이지 토론 한 번 안 하고 열흘 만에 밥상에 올리는 불완전 판매를 기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렵게 선거해 갖고 국회의원 뽑아 가지고 국회에 예산 책정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이 결과가 잘 안 나와. 생각보다 어려워. 논점이 많아. 그때는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든지 그런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나랏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터져 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검찰청 폐지하자. 이번에는 아예 정권 초기에 하자. 좋아요. 그런데 막 검토를 해 보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같이 들어 보자. 그것 다 검토했다. 했는데 약속대로 추석 밥상 전에 해내셨다. 아, 그것 좋지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든지. 저는 그게 헌법과 국가조직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아슬아슬하지만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실익은 없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과감히 받고자 했던 특검 연장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 저희 그것도 생각했었거든요. 그것 깨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어떻게 깨진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극단주의를 경계하고 정치의 양극화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 기사를 읽습니다. 여기 민주당 얘기도 있고 야당 얘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대깨문,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이리저리 마구 내둘리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아이고, 곽 의원님이 등장하시네요—의원마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 안팎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여권 성향 유튜브 권력의 영향력을 비판했다가 십자포화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작은 쓴소리도 못 받아들이는 경직성도 강경파 눈치를 보기에 빚어진 현상이다.

야당—저희 국민의힘이지요—도 도긴개긴이다. 국민의힘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로 대표되는 우파 강경 세력에 당의 진로가 좌우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은 지난 대선 전후 세력을 급팽창했고 당 지도부 선출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씨가 담임목사인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손 씨는 아스팔트 우파의 핵심이자 반탄 집회 주도자 중 한 명이다. 중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강성 지지층 결집만 노린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어 오늘 시작하는 대정부질문도 국정 현안의 진지

한 논의가 아니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 국내외를 흔들고 있는 유명 우파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은 결국 제어되지 않은 보혁 갈등의 증폭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 혐오가 격화되고 있는 우리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극적 사태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 경제 저성장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치권은 갈등 조장이 아니라 협치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사설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다 맞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골간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에 개딸 문제가 있고 저희도 강성 지지층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내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흥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선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흥분하기 쉽고 선동되기 쉬운 국민을 모시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는 일반 국민보다는 내막을 더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의 진실들을 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균형을 잡고 저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이제부터 혼란을 증강시킬 거냐, 혼란을 증폭시킬 거냐, 아니면 정국을 안정으로 이끌 것이냐, 그것은 300명 국회의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정국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저희는 실패했고 그 결과 실패를 넘어서 국론은 분열되고 양당, 양 진영의 강성 지지층은 전례 없이 격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의 합의 처리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소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정확히 진행된 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정부조직법 13건 가져오셨고 열흘 만에 처리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3건 들고 왔었고 통과시키는 데 넉 달 걸렸습니다. 둘 다 잘못됐습니다.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그다음에 여가부, 3건 갖고 무슨 넉 달이나 그렇게 합니까? 그게 발목 잡기였겠지요. 그런데 13건. 아니,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검찰청 폐지 이런 것 갖고 열흘 만에 하자 이것도 잘못이지요. 이건 졸속이지요. 과거에 독재정부 시절 때도 이런 날치기가 됐을까, 열흘 만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70석의 여당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전개이지. 이번에도 정무위원장을 저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무위 게 빠진 걸로 저는 봅니다. 정무위를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께서 하고 계셨다면 저는 금융감독 체계까지 개편됐다고 봅니다. 그게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선거는 그래도 3년 남은 게 진실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가 다가와서 정치가 격화되는 것 그것까지 인간의 본성으로 제어가 안 된다?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봄, 그 정치적 격변을 겪고 이제 국회의원선거까지 3년 남았고 대통령선거까지 5년 남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합리적인 토론을 못 하고 일방통행을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극단의 정치가 깔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문제점들을 조금 더 설명드

리고 알고리즘과 양극화 정치에 대해서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동시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로 저희가 추정하는 검찰개혁의 문제 이것부터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하는 겁니까? 제가 선명히 들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화되어 있다, 기소와 수사를 다 하기 때문에 검찰권력이 견제되지 않고 정치를 위협했고 사법도 위협한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겪어 보니까 정치의 검찰화, 정치의 사법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정치권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신,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이 계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분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견해를 표시하실 때 양복 저고리를 벗어서 큰 손으로 흔드시면서 흔들리는 양복을 보지 말고 흔드는 손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분이 전하고자 했던 말은 널뛰는 검찰을 보지 말고 검찰을 흔드는 정치권의 손을 봐라. 결국 정치가 검찰을 흔들기 때문에 검찰이 흔들린 거다. 지금 이 시점에 돌아봤을 때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70~80%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검찰이 먼저 정치에 진출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정치가 검찰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아니면 검찰의 회유에 정치가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정권을 점점점 거치면서 서로 검찰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냐. 제가 압축적으로 기억하는 검찰과 정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폭주로 인한 피해는 양당 모두 보았습니다. 근래에 가장 큰 피해는 아마 저희가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취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특정 정당의 이슈가 아니고 양당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일, 양당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상의하고 토론하면 좋은 귀결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일을 하는데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셔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신구폐, 신조직을 먼저 만들고 구조직을 없애야 한다. 선신구폐, 조직의 기본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단한 말로 말씀드릴 것 같지만 이사 갈 집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존의 집을 허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하고 중수청 간판은 다는데 그 집 내용이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고 1년 동안 잘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집 검찰청은 이번에 간판을 뗍니다. 기존에 검찰에 살고 있는 1만 1000명의 수사관, 2300명의 검사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1년 동안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할까요?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고 아내고 남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많은 검사들이 구직 행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로펌으로 가고. 그게 시대의 변화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준비된 검찰개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유능하고 자긍심 가지고 일했던 검사들이 무조건 로펌으로 팔려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의도한 바입니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요. 토론을 안 했으니까, 논

의를 안 했으니까, 설계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1만 1000명의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딱 간판만 갈아끼우면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1년 동안 2300명의 검사와 1만 1000명의 수사관은 열심히 일을 할까요? 성심을 다할까요? 제 사회생활 경험으로는 마음이 떠서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공중에 붕 뜨는 민생범죄, 공안범죄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힘을 몰아주니 신이 났기 때문에 경찰이 다 해낼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수청을 만드시는 이유는 중대범죄는 수사청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수청이 1년 동안 설계 안 되면 중대범죄는 그사이에 누가 하는 겁니까?

SK텔레콤 뚫렸습니다. KT 뚫렸습니다. 롯데카드 뚫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뚫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경찰한테 질문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마 중대범죄수사청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빨리 열심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시자고요. 만들고 폐지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일단 검찰청부터 폐지합니다. 중수청, 공소청 간판부터 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신선구폐, 아니지요. 선신구폐, 먼저 신조직을 세우고 기존의 집을 허물어라. 원칙을 강조드려 봅니다.

두 번째, 제가 무한히 얘기하고 있고 무한히 얘기할 문제입니다. 수사 핑퐁의 문제입니다.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 주시지요.

결국 저희가 호기롭게 1차 검수완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저렇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말이 평균이지 사건별로는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의 법조인들이 저한테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기간만 저렇게 늘어나지 저 기간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돈 있는 사람이야 괜찮지만 서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망한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그래서 행안위에서 윤호중 장관님께 저 문제 하나 물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청 폐지하는데 딴 얘기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다. 저것만 물었습니다. 수사 지연되고…… 아까 칼럼에서 잘 나왔지요. 사건 6개월 이내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과 2년 정도 후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왜냐? 증거가 훼손되고 기억이 조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넘어서 수사가 지연이 되면 수사가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고 재판이 무죄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검찰개혁을 이게 가족을 사랑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가정폭력과 유사한 게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부작용이 심하면 안 됩니다. 검찰개혁 하시자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어떤 분이 대안을 안 내신다고, 비판만 한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래서 대안드리지 않습니까? 수사지휘권을 차라리 복원시키시자고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 없애야 한다면, 보완수사권까지 다 없애야 한다면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키면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견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지휘권이란 말이 경찰의 자존심을 긁는다면 상처를 낸다면 수사요구권이라고 하든지 수사지휘권 말고 수사견제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완수사요청권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좀 명예롭게 하고 그 절차를 어떻게 컬래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를 세우자.

저는 그 정도 설계는 해야 이거를 통과시키지 이것에 대한 설계도도 못 보고 토론도 안 하고 법사위는 난장판 나 있고 이러고 일주일 만에 통과시키자 그러고. 이걸 무한토론을 안 하면 저는 그게 임무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반대가 아니라 찬성인데 이런 상태로는 찬성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설명드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국민들은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성년이 돼서도 장애가 있다든지 그리고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판단할 능력이 없다든지 이럴 때 가정법원이 나서서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후견인이 필요합니다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검사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셨는지 저희 행안위에서 주호영 의원께서 여쭈셨어요, 법원에 계셨었으니까.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 좋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루었냐, 답도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 다 점검하고 논의하는 데 한두 달이면 됩니다. 한두 달 후에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그대로고 민주당 의석도 그대로입니다. 이걸 왜 생략하시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9월25일 24시 경과)

특별사법경찰 문제 이것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사법경찰이 계신데 이분들은 우리가 아는 경찰청 소속 경찰이 아니라 관세청, 국세청, 농림부 또 노동부, 지자체 이런 데 사법경찰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혼자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십니다. 이 문제도 주호영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답을 듣지 못했고 토론하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 좋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 동의합니다. 반드시 하시자고요. 그런데 특사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 법이 한 300페이지가 넘는데 아마 이것 다 읽어 본 국회의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읽어 보다가, 필리버스터 준비했는데도 330여 페이지 다 읽어 보다가,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30여 페이지 중에 한 200페이지 정도는 부칙입니다. 왜냐? 이번에 정부부처들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 명칭이 들어 있는 법들을 다 바꿔 줘야 돼요. 그게 몇 건이냐? 627건입니다. 627개의 법률을 저희가 같이 손대고 있는 겁니다. 부칙을 통해서 명칭만 삭삭삭삭 바꾸고 있어요. 대단히 스마트한 것 같지만 커다란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검찰청장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으로 둘로 갈립니다. 그러면 어떤 검찰청장은 공소청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어떤 검찰청장은 중수청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판단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토론해 본 국회의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구분된다면 법안에 기획예

산처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 뭘로 바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이 될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이 될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그 명칭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627개를 이렇게…… 옛날 80년대나 이렇게 했던 거지, 팔구십 년대나. 요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 터질지 모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압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선신구폐, 새집을 짓지 않고 옛집을 허물지 말라. 두 번째, 무한 핑퐁, 이미 시작된 무한 핑퐁을 증폭시키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후견인 제도 이것 어떻게 할 거냐. 특별사법경찰,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가 지휘할 거냐. 다섯 번째, 627개의 부칙 개정은 충실히 검토된 것이냐. 아니, 필리버스터 맡은 저도 다 보기가 어렵던데 어떤 국회의원이 다 보셨겠습니까?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 중요한 건들은 오히려 당론으로 진행이 되니까 잘 보지를 못해요.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경에, 저는 왜 특검법 연장 안 하는 합의와 정부조직법 통과 합의처리한다는 이게 왜 깨졌느냐? 합의됐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토론하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왜 깨졌느냐? 저는 강성 지지층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얘기하면 또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당의 강성 지지층 문제도 같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성 지지층에 포획이 돼서 지금 정부조직법도 충실히 논의되지 못하고 별 실익이 없고 국민통합에 저해만 되는 특검 연장법은 통과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아까 읽어 드린 칼럼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스스로는 그렇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먼저, 저희는 내막의 상황을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합의처리를 하고 충실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강성 지지층의 포로가 돼서, 포획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국회가 둥둥둥둥 떠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2시간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회에 와서 보니까, 1년 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단체전입니다. 개인의 소신을 넘어서는 당의 노선이 있을 때는 따라야 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 그런데 저는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의 당론은 누가 정하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충실히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면 그 당론을, 왜 단체전을 힘들어하겠습니까?

문자 폭탄과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당론이 결정되고 그 당론 속에서 여야 합의가 파기되고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둥둥둥 떠서 627건의 법안 개정도 살펴보지 못하고 정부조직법 일방 통과를 시도하고 있고 이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제한 토론을 나섰는데 발목 잡기라고 하셔서 제가 1시간마다 물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이 다 설명했는데도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합리적인 거는 원 플러스 원, 한 달 동안 논의하고 필요하면 한 달 더 논의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3개 정부조직을 가지고 넉 달 걸렸는데 그건 너무 길었습니다. 동포청 만들고, 국가보훈부 승격하고, 여가부 폐지하는 거, 여가부 폐지는 논점이 많으니까 오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합의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

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동포청하고 보훈부 승격하는 2건이었는데 그거 넉 달 걸렸대요. 저는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뭐 넉 달 괜찮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 5년이니까 넉 달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건이세요. 그것도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환경부 설치, 성평등부, 어마어마한 것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라니요. 발목 잡기가 아니라 이건 솔직히 발목 잡을 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바짓가랑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알리지 않으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627건 부칙 조항 바꿔서 명칭 변경하는 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모르셨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제가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국민감정이 좋지 않고 다 압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서 이게 피해받은 걸로 치면 피장파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문제를 다 빼고 보자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현시대를 위해서 일단 무한 핑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 반대만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수사지휘권·수사요구권·수사조정권·보완수사요청권, 뭐가 됐든지 명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서 서로 컬래버 잘하게 하자.

검찰은 머리이고 경찰은 손발이다, 그게 프랑스에서 나왔던 법 논리인 것 같은데 머리하고 손발이 그래도 한 몸으로 붙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머리하고 손발을 잘라 놓으면, 목을 잘라 놓으면, 따로따로 놀면 되겠습니까? 핑퐁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얘기하면 민주당이 믿지 않고 민주당이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듣지 않고, 이게 국회 현실인데 귀를 열고 좀 들어 주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이것을 다 들고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청과 통합,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 3대 국정원칙 1번입니다, 경청과 통합.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국정 5대 목표 첫 번째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하여튼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타임라인의 정치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임라인을 그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쭸더니 과거를 잊고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하도 헤매니까 '옛날 일은 덮고 오늘부터 잘해라' 해서 타임라인의 정치를 누군가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에 타임라인의 정치를 제안드립니다. 정부조직법부터 최소한의 토론을 하고 하시지요. 이렇게 끌어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정부조직법의 첫 번째 문제점,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섯 가지 등등의 관점을 설명드렸고요.

방통위 문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방통위는 5인 체제인데 대통령이 1명,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해서 5인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이게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야당 시절 민주당에서 2명을 지명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인 체제로 굳어졌고 2인 체제 속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2인 체제가 결정을 했다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까지 당했다가, 그때 하루 만에 탄핵당했지요. 일도 안 하고 탄핵당하고 돌아왔고. 그런데 결국 또 정부가 바뀌었지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저는 그분 전혀 모르는데 TV 화면이나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꼬장꼬장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국무회의도 못 들어오게 아웃되셨고 배석 금지시켰고. 저는 그런데 거기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위인폐관을 해 버리고 계십니다. 방통위를 폐지해서 이진숙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위원장을 데리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맞는 정무직을 배치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확한 대화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고, 다양한 노력을 충실히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뭘 떠나서 이렇게 훅 건너뛰어서 법을 바꿔서 조직을 폐관하고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게 하겠다, 이것을 기발하다고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방송 3법 다 통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 가지고 계십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몸에 도움되는 약이 쓴 것 아니겠습니까?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하실 수도 있고 같이 안 되면 통치 철학에 맞춰서 물러나 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짚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생겨나는데 토론도 없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옛말도 있지요. 법을 바꿔서 인사 조치를 한다, 저는 정말 안 좋은 헌법 선례라고 생각하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무직이 임기가 있는 임기제지요,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임기제, 위원회 이 문제가 심각해서 이거는 여야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알박기 한 분들이,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 오십몇 명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3년을 다 건너뛰어서 근무하시고 이제 이재명 정부까지 건너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는 안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해도 이렇게까지 방법은 쓰지 않은 것이고 또 이거 잘못 쓰면…… 옛날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언제 적용 시점을 볼지 모르지만 차라리 공공기관장과 여러 가지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춘다 하는 법 개정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책을 가지고 있지요. 여야가 공유하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 임명하는 정무직의 범위, 공공기관 장의—메뉴라고 할까요—그 범위를 딱 책으로 정리해서 여야가 공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논의하시지요. 이 정도 제안은 해 주셔야 법을 내고 있는데 속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못 들었고요. 그걸 공공기관장 쫓아내기로 쟁점이 붙을지 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많이 양보한다 치면 그 법 통과시키고 다음 정부부터 적용시키면 진짜 깔끔하지요. 그런데 방통위 법을 이렇게 바꿔서 이진숙 위원장 나가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통령 임기와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춘다 이거 아주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희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면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정무직들을 가져간다,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져와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다? 저는 논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논의에 응해야 되고요. 아니,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통위를 없애서, 안 그래도 파행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적으로 첨예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은, 간판만 갈아 끼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 말고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합격점 주면 저희가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공공기관운영법도 바꾸시더라고요.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노동이사 자리를 하나 좀 늘리면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걸 늘리면서 혹시 지금 15명 정원으로 돼 있는 이사 자리가 부족하면 16명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공공기관의 이사 수를 16명으로 늘릴 수 있는 법 개정도 시도하실 것 같습니다, 법안이 이미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이사 숫자가 부족해서 잘 안 됐다, 문제가 됐다?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이사 1명 추가해서, 15명을 16명으로 추가해서 잘될 것 같으면 저희가 1초 만에 합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문제는 이사 숫자가 15명에서 16명으로,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 개정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법 개정 추진하시면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과 임기제의 임기 맞추는 것 그런 것 얘기도 안 하시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만 살짝 한 글자 넣어서 폐지하고 신설하고. 위인폐관 이 말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경박한 얘기지만 법꾸라지가 아니라 헌법꾸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아닌 겁니다.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떠올라도 생각하고 말아야지 이것을 관행으로 남기면 그 후과는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기획예산처 설치에 대해서도 다시 좀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과거에 제가 좀 젊었을 때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획예산처는 작아서 좀 문제였습니다, 그때. 경제기획원이 있었고 재무부가 있었는데 합쳐서 재정경제원이 됐는데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2개로 다시 쪼갰는데, 2개가 아니라 그때 3개로 쪼갰지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3개로 쪼갰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그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언제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년이었는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나? 기획예산처가 너무 작았어요, 제가 볼 때. 재정경제부는 너무 컸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 관련 법이 다 재경부에 가 있었어요. 작동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기획예산처는 작아서 문제, 재정경제부는 예산이 없으니까 경제조정이 안돼서 문제, 힘이 없어서 문제. 기획예산처는 작아서 문제고 재정경제부는 큰데 힘이 없어서 문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을 해야 되는데 금융감독법이 재경부에 가 있어서 문제 이렇게 문제가 압축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를 합쳐서 기획재정부를 만들고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보내서 금융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게 시대적으로 변천한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것 하나 좀 올려 주시지요.

바로 저 그림입니다. 역대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 부처들이 어떻게 변신해 왔는지 제가 압축적으로 그려 봤는데 저기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쭉 해 오다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돼서 문제가 돼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3개로 나눴다가 문제가 돼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로 왔는데 이번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로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가 괜찮았으면 그때로 가도 돼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문제가 뭐냐? 기획예산처는 너무 작았어요. 재정경제부는 기능이 큰데 권한이 작았어요. 그래서 몸집만 크지 파워가 약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을 해야 되는데 금융정책법이 재정경제부로 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가느냐? 기획예산처는 작아서 문제였는데 더 작게 만드세요, 기획예산처를 크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 법 기능이 없어서 금융위원회로 만든 건데 더해서 그것을 다시 재정경제부로 보내요.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위축시켜요. 그러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기획예산처가 돌아가겠습니까? 재정경제부는 비대하지만 또 막상 예산이 없어서 권한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기재위에서 이것 토론했나요? 기재위에서 토론만 했으면 제가 여기 소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나왔을 거예요. 이게 토론 없이 통과되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그려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번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게 세입세출이 같이 있어서 권한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쪼갠다 치면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 옛날처럼 쪼개야 돼요.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이것은 박수민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경제 부처에 근무했던 많은 선후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발전적으로 들고 오면 저희가 꼼짝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숨어 있는 것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중간서부터 민간 중심 경제가 자유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87년 체제가 대한민국 성장을 폭증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치금융·관치경제가 민간 중심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그때가 보이는 손 국가 주도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 민간 중심의 경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뭐냐? 트럼프부터 보이는 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개입주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가개입주의에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는 조직이 뭡니까? 그러면 그게 보이는 손 시대의 경제기획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제기획원에 인구 기능을 넣는다든지 저출산 해결의 문제의 미션을 집어넣는다든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견제를 열심히 드려야지요.

그리고 밑에 금융감독집행기구 이게 한국은행 밑에 은감원 그다음에 증감원 그다음에 보감원, 신용관리기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외환위기 겪으면서 이것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때 진짜 저것 기구 통합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폐합이지 통합이 얼마나 치열한 이해관계를 가져오는지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통합했습니다. 1999년인가 98년에 통합했고 오늘날의 금감원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 그다음에 자금 유출, 소비자 보호 이런 세 가지 핵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또,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중에 파다한 것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으로 쪼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을 이미 들고다니셨어요. 금융감독원 저렇게 어렵게 통합해 갖고, 은행·증권·보험 분리되어 있는 것 통합했

는데 저것 왜 쪼갭니까? 직원들도 다 반대하고…… 하여튼 오늘 낮에 이것 철회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기왕에 철회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발전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부처의 문제는 결국 이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정치적으로 볼 이유도 없지요. 세입세출이 같이 있어서 권한이 편중되었다 이런 것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대한민국이 저성장에 들어갔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지금 무역에서 큰 파고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의 파고, 무역질서의 재편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이 저성장의 늪을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이것을 보셔야지요. 이것을 봐 주셔야 돼요.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저는 비저블 핸드(visible hand)가 필요하다. 보이는 손이 필요하다. 아니, 트럼프가 먼저 움직였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비저블 핸드를 만드는 게 낫겠고 그것은 경제기획원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너무 급히 추진하셔서 제가 이름을 새롭게, 21세기에 맞게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랬으면 제가 이름이라도 하나 만들었을 텐데. 경제기획원이든 미래기획원이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인구가 정말 중요하면 인구기획원으로 이렇게 해서 뭘 가야지.

여러분들 작년 여기에서 폐업자 100만 명 시대라고 그렇게 외치셨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제 경험으로 저성장의 이유는 딱 서너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일단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령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생산가능인구라는 게 뭡니까?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소비가 커요. 나이가 들면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64세 이상 고령인구는 늘고 노후 빈곤은 높고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소비가 줄지요. 구조적으로 줄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GDP 통계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내수가 안 살아나는 가장 큰 문제는 건설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한참 얘기했는데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잘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를 다 못 고치고 끝난 거예요. 고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이어서 고쳐야지 문재인 정부 때 것으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것 비슷하게 돌아가요, 9·7 대책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엄청 공격하고 토론을 드렸는데 잘 안 들으시던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건설경기를 발목 잡고 있고 내수경기 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경기 키우면 내수경기 살아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희가 건설경기 갖고 먹고사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큰 병목 중의 하나다,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건설경기를 살려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진작하자, 이게 아니고 부동산을 그냥 정상화시키면 괜찮아지는 포션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인구문제를 다뤄야 되고 인구문제는 답이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다문화로 가든지 로봇을 키우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그 조합을 전략적으로 비저블 핸드, 보이는 손이 짜야 됩니다. 경제기획원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수출이 여전히 그럭저럭 가고 있는데 내수는 왜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의 시대로 가겠습니까? 수출 기업이 대한민국 내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기업이 대한민국 내에 투자를 왜 안 합니까? 노동규제, 중대재

해처벌법,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세금은 안 바꿔 주고.

세법도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해서 세수 결손됐다던데 제가 그것은 좀 이따 한 두세 시간 동안 다 설명드릴게요. 절대 그게 아니고, 세금을 깎아 주는 이유는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해 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깎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법인세 깎는 거에는 그렇게 동의 안 해요. 법인세? 제가 민간에서 사업해 보니까 중심 세목과 주변 세목이 있어요. 저희가 잘 거둬야 되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이런 굵직굵직한 세금들이 있어요. 이런 세금들을 많이 거둬야 재정이 탄탄하고 저희가 부의 재분배를 하고 사회 인프라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잘 걷히지요? 거래가 활발하고 기업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월급을 주고 거래를 많이 해야 거기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규제.)

규제라고 말씀하셨나요?

규제 맞지요. 그런데 그 규제에 더해서 세금으로 치면 부의 재분배를 한다고 해서 타깃 해 줬는데 세금은 많이 걷히는 게 아닌데 경제활동에는 부담이 큰,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을 걷는 실익보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폐해가 큰 세금들이 있어요. 그게 종부세, 상속세입니다. 제가 국회 와서 상속세 깎자 그랬더니 '경제관료 출신에 사업했던 사람이 또 저런 얘기 한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법 개정안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시작한 건데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잘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잘 오르니까.

그런데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뭡니까? 지배구조 바꾸는 건데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안 바꾸는 나쁜 관습도 있어요. 그것은 상법 개정안으로 바꿔야지요. 그러나 기업들이 나쁜 지배구조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은 상속세예요. 지금 다 가서 만나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상속을 해야 되니까 기업 가치를 잘 안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주가에 딱 연동돼 갖고 상속세 50%, 60%까지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을 안 했던 거고 지금 그것을 강제로 주식 배당을 배당 환류시켜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아지는 건데 이것을 압박만 해서 하는데 지속가능성 떨어져요. 세금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김동아 의원님이. 기업은 하나의 단편적인 법안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근로자 다루는 노동법 그다음에 재해 다루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내가 벌어서 얼마를 가져가는지가 결정되는 세법, 이것을 다 보고 결정하는 거지, 환경 규제까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사업할 만하다, 안 하다 결정하는 거고. 말이 사업이지 이게 사업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100명 중의 1명이 성공하나요? 아니면 1만 명 중의 한 명이 성공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로 따지면 사업하는 사람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그 위험에 보상할 수 있는 유인이 없으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 잘 안 하는 겁니다. 땅값 비싸지 인건비 비싸지 노동 규제 있지 잘못하면 잡혀가지 그리고 벌어 봐야 세금으로 가져가지, 누가 합니까?

이건 균형의 문제입니다. 제가 부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균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 있고 성공한 부자가 있고 성공할 부자가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균형되게 다뤘을 때 자본이 순환하고 인재가 순환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걷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부분의 균형이 깨졌으면 깨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틀렸으면 제가 틀리고 제가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균형이 깨졌다고 봐요.

내수가 왜 안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지요. 수출 기업이 유인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서 소비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안 하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인구와 수출 기업의 투자 문제, 기업의 유인 문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경제기획원 정도 탄생하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재정경제부로 턱도 없습니다. 저런 정도의 비저블 핸드를 검토하는 거를 저는 제안드리고요.

금융감독 기능 분리하는 건 또 막판에 빼셨으니까 뭐 길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잠복됐지만 시중에는 또 위인설관이라고 소문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갑자기 금융소비자원으로 왜 쪼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례가 호주에 딱 하나 있다는데, 호주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금감원 직원들 전체가 반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드롭한 거는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협상 문제 다시 한번 제기드리겠습니다.

자화자찬했다가 잘못하면 탄핵당한다 등등까지 나왔기 때문에 꼬인 거는 드러난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당초 3500억 불이 문제였는데 그때 3500억 불 합의 잘되고 큰 틀의 합의가 잘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첫 번째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3500불 금액 자체도 문제지만 3500불 세부 내용이 합의 안 됐는데 3500불에 합의됐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100원도 아니고 200원도 아니고, 동맹이면 계산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동맹일수록 계산을 정확히 해야 서로 실례를 안 하고 결례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500불을 합의해 놓고 세부 내역에서 이견이 있다, 전체 금액에서 문제가 없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얘기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일단 불투명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합의할 게 없을 정도로 합의 잘됐다, 합의문을 안 썼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된 거고. 좋아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3500만 불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처음에 3500만 불을 거명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EU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높은 금액을 먼저 던집니까? 일본이…… 아니, 미국이 이걸 먼저 던진 겁니까? 제 생각에 제가 국제 협상을 해 본 경험으로는 지금 미국은 관세를 이만큼 25% 높여 놓고 투자를 얼마 할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보이고. 그러면 3500불이라는 숫자를 미국이 콕 집어서 얘기할 것 같진 않아요. 3500불은 우리가 제안을 먼저 했든 아니면 우리가 그거보다 높이 했다가 뭐 좀 깎았든…… 아니지요, 우리가 낮게 했다가 조금 높였든 뭔가 우리가 제안한 금액의 기준에서 3500불이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처음부터 무리하게 질렀어요.

자, 일본이 GDP의 13%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를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엄청

많아요, 외환보유고가. 그리고 EU는, EU가 차라리 합리적이에요. 6.9%, 그러니까 GDP의 한 9%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EU가 오히려 제일 합리적인 선이고 또 EU는 그냥 유로화 자체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걱정이 없는 거고. 달러 투자를 해야 된다면 가장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GDP의 무려 20.4%, 일본보다 거의 한 배 반에서 두 배, 한 1.7배. 외환보유고는 우리가 일본보다 엄청 적지요.

그리고 유럽 6.7%에 비해서는 거의 3배를 불렀어요. 이게 어떤 호기 속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것 지금 담당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실수에서 빚어진 건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이것 주워 담느라고, 관리하느라고 진땀을 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에 지른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세부 내역이 없이 3500불의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거야말로 잘못하면 진짜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당할까 봐 안 했다' 그 말 이해돼요, 진짜.

그리고 지금 통화스와프 얘기까지 나오고 외환보유고까지 나오는 것 보니까, 저는 처음에 3500불 얘기했을 때 기업들이 하는 것 모아서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 순수한 금액이 3500불로 지르는 것 상의했나 봐요.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안 되고.

그리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또 대안 얘기하라고 하실 거니까 대안 얘기해 보면 일단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처음에 잘못해서 결례한 게 있으면 별 방법 없어요, 미국하고 잘 지내고.

우리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안보적 리스크를 훨씬 감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칫 반미 감정을 촉발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선봉에 나서 있는 이 안보적인 위험 부담, 위험 비용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맹에 맞게 계산을 조정해 가야 되고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은 역전돼 있습니다. 도요타는 15% 관세로 팔고 폭스바겐도 15% 관세로 팔고 현대·기아차는 25% 관세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에서 타격이 왔을 때 가장 취약한 나라는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이것 지금 엄청난 것 꼬인 겁니다. 제가 야당이라서 물고 늘어지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 대한민국 모든 하는 일 중에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짚으라면 이것 짚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도 미국 관계는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노선을 잘 유지하느냐 발전시키느냐 이게 대한민국 발전의 넘버원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혐중 시위·집회한다고 좀 단속하라고 했는데 단속할 수 있지요. 우리 김민전 의원께서 '반미 시위·집회도 같이 단속해라', 이것 아주 균등한 얘기지요. 다 걱정 맞아요.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미일 협력을, 한미동맹을 계승하셨어요.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4시간 전에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잘했는데 지금 아직 꼬이고 계시니까 긴장 바짝 하시고.

대한민국은 반미냐 친미냐를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미국과 연맹을 맺었을 때 중립화되는 나라입니다. 70년간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주국방? 자주국방 당연히 해야지요. 자주국방 하면서 동맹을 안 맺는 나라가 있습니까? 유럽에서는, 여러분들 세계사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삼국 협상, 삼국 동맹. 영국·프랑스·러시아의 동맹, 영국·프랑스 동맹.

전 세계는 동맹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이것은 유럽에서 시작했지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전 세계가 합종연횡을 해 나가고 있는 순차적인 변환의 과정입니다. 원교근공, 동양에서도 이 원리는 일찍이 발전했습니다. 합종연횡, 서로 연맹을 맺어서 세력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은 자주국방과 대척점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방력은 당연히 높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동맹을 맺어서 실익을 찾아가고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후손들을 잘살게 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동맹이 넘버원으로 제일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모저모 다 따지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이 중립화되는 유일한 길, 후손들이 안전한 길은 한미동맹이 기초입니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나서 중국과의 교류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한미동맹이 숫자, 관세, 무역 앞에서 꼬일 수 있다, 이것 정말 식은땀 나는 얘기입니다. 잘하시고요. 이런 것을 잘 다루는 게 지금 조직 개편에 녹아 있으면 제가 무제한토론 안 한다, 이런 것 제가 아니라 기재위에서 토론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하셨으면 제가 안 한다.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다입니다.

기후에너지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환경을 보존하고 기후정책을 짜는 곳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환경규제를 발전시켜 온 그런 부처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이번에 가져가시는 에너지실, 흡수시키시려는 에너지실은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 특히 전기 공급을 주력해 온 부서입니다. 즉 환경부는 규제부처이고 에너지실은 공급부처입니다. 규제와 공급부처를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만드시려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즉 지금 잘 안 되는 일에 도전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선례도 있습니다. 영국이 2008년에 에너지기후변화부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공급과 기후대응, 환경 이런 규제부처를 하나로 묶었지요. 대한민국이 시도하는 콘셉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일 생겼나요? 전력 공급 부족해지고 전력 도매가격 높아지고. 여기서 끝났나요? 국민 피해 엄청났겠지요. 약해져 가던 영국 제조업 기반이 더 약화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벤치마크해야 되는 교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근무하면서 조금 영국도 살고 했는데 다 아실 겁니다. 유럽 가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가 에어컨을 못 만들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에너지 가격 비싸서 그럽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탈원전이든 뭐든 할 수 있는데 그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과 투명하게 토론돼야 된다, 공론화돼야 된다, 그게 아니고서는 합의되지 않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탈원전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한두 줄로 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 환노위에서 토론했습니까? 산중위에서 토론했습니까? 제가 무제한토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토론에서도 제가 신재생이 중요하냐, 원전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지를 받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인류는 신재생과 원전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이미 화석을 줄이고 탈탄소, 넷 제로, 무탄소로 가는 겁니다. 무탄소에는 신재생과 원자력이 동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과 원자력이 갈등 게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인류는 석탄·가스·석유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이것을 줄이려면 원자력과 신재생이 컬래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림이 있는지, 그런 그림을 토론하고 있는지, 저희는 토론을 생략하고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채점 거부라고 판정을 드린 겁니다.

EU 택소노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분류체계, 녹색에너지원을 분류하는 체계인데 거기에 이미 원자력, SMR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이 그렇게, 북극곰의 눈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유럽이 왜 그렇게 할까요?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을 감당 못 해서 하는 겁니다.

여름에 이태리 한번 가 보시고 겨울에 영국 한번 와 보십시오. 춥습니다, 영국. 이태리 덥습니다. 전기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논의했느냐, 국민과 합의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할 일 아니다, 열흘 만에 할 일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부 막판의 혼선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잘 확인하실 수 있는 위치들에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꼭 건의드립니다. 민주당 정부 5년 차에 호기롭게 탈원전을 했다가 전력이 부족해서 원자력 복구하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다면 제가 교정하겠지만 그때 부랴부랴부랴 해서 해 보고 나니까 전력 공급이 뚝뚝뚝 떨어지고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부랴부랴 원전 복구를 위해서 매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독일과 영국의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그리고 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AI가 전기 먹는 하마이고 또 에너지 비용 자체가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대한민국은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한 역피라미드형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아마 저희는 2개를 조화해야 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최초의 다문화를 최소화하면서 로봇과 AI로 가는 나라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럽이나 이렇게 보면 다문화를 소화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주관적 판단이지만 저희는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저항감이 있고 이게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외국 사람들 뒤에다 다 '놈' 자를 붙이는 나라를 제가 잘 못 봤는데 저희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분이라 안 하지요? 일본분이라 안 하지요? 중국분이라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잠재의식에 피해의식들이 다 녹아 있는 건데 지금 다문화 사회가 커진다, 저희가 '분'으로 부르겠습니까, 그

분들을? 이 정도, 뭐랄까요, 이제 그 판별력 속에서 저희가 사회를 운영해 가야 되는데 저는 다문화 사회가 말은 멋진데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다문화는 소수 다문화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 인접국이 있고 거기 인구는 거기서 몇 %만 보내도 우리나라는 마비가 되는 정도 아닙니까? 예전에 이태리에서 중국에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발 중국 관광객을 보내지 말아 주세요. 이태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고 우리가 관광산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중국 관광객을 그만 보내 주세요' 하고 중국 정부에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공문을. 중국 인구의 파괴력이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다문화로 간다? 저는 감당 안 될 일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농어촌에 가면 생산 인력, 노동 인력은 이미 외국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필수적인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비자를 잘 관리해서 관리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지금 실리콘밸리 가 보면 완전 다인종 사회 아닙니까?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즉각적으로 따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뭔가 고급 인력들이 더 살기 좋은 사회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정도 다문화는 빨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다문화를 과감히 다 못 한다면, 플랫폼 국가 정도로 못 간다면 저희는 빨리 로봇과 AI를 개발해야 되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는, 선택이 아닌 필요에 선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봇과 AI 시대를 어떻게 열 것입니까? 전깃값이 싸야 됩니다, 전깃값이. 그래서 기후에너지부를 탄생시키고자 싶으신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의 정치 리더들이 해야 되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부가 성립된다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다는 전제가 어디 있냐, 과도한 예단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신다면 제가 공격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과 토론 자체를 못 받아 봤다니까요, 제가. 환노위에서 토론했다는 얘기 자체를 못 들어 봤고 산중위에서 토론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잠깐만 토론드려도 전깃값이 로봇과 AI 시대, 다문화 시대와의 조화 이런 것까지 다 논점이 어우러지는데 전문가들 모시고 좀 더 토론하면 얼마나 더 좋은 논점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담아서 통과시키는 데 100년 아니고 원 플러스 원, 한 달 더하기 한 달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더하기 한 달 더 해도 이재명 정부고 여당이세요. 170석이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뻔한 것이 특검법 연장을 축소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하는 건데 그게 깨졌다. 왜 깨졌을까? 강성 지지층의 문제다. 그래서 극단의 정치가 왜 문제인지 제가 아까 기사를 한참 읽은 겁니다.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 설명을 드렸나요? 독일은 2021년, 얼마 전입니다,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했지요. 좀 늦게 했네요. 독일이야말로 탈원전을 가장 먼저 외쳤고 또 신재생 100%를 주창했던 나라인데 불과 2년 후 23년에는 경제에너지부를 재출범시킵니다. 환경부와 다시 분리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아마 러-우 전쟁으로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더 심각했지요. 독일은 에너지 문제가

난리 났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대등하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시면, 제 관점이지만 꼭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전 세계 패권 1등 국가입니다. 산업도 다양하고 없는 게 없는 나라지요. 중국, 어느새 G2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내부의 빈부 격차는 극심하고 아직 못사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발전 정도와 자본의 축적 그다음에 기술의 첨단이 이제 G2라고 불러도 무색하지가 않고 제조업이 너무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 G2라 부를 만해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강대국들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 네 나라 정도 있습니다. 프랑스, 복지로 나랏빚 많이 써 갖고 지금 난리 났지요. 폭동 나고 지금 마크롱 귀국하고 난리 났지요.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영국, 예전 같지 않지요. 그래서 브렉시트 했습니다. EU에서 못 견디고 독자로 살겠다고 브렉시트 하고 지금 파운드화가 많이 떨어졌지요. 옛날의 위상이 아닙니다. 독일, 그나마 잘 나갔습니다. 독일 잘나갔는데 지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던 에너지가 뇌관이 돼 갖고 에너지에서 난장판이 났습니다. 탈원전이고 뭐고 다 도망가고 지금 에너지 안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독일의 위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전 세계 패권국 상황이고. 그 외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태리,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태리, 캐나다, 호주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이태리, 캐나다, 호주, 대한민국, 네 나라 비교해 보십시오. 이태리, 캐나다, 호주, 대한민국. 산업의 다양성, 수출의 능력, 문화의 파워,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잘나가고 있습니다.

즉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다는 국뽕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의 문제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깨를 견주고 있는 비슷한 나라들의 동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 얘기로 듣고,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비용을 급등시켜서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나라가 엉망이 됐다 하는 얘기를 먼 나라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수민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부야말로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 거쳐서 되겠냐? 아니, 그래도 그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부가 가지고 있는 유럽의 선례 이런 것, 제가 제시한 유럽의 영국과 독일의 선례가 잘못됐다면 얘기하십시오.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생략된 것은 거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막판에도 실무적인 문제를 깨닫고 엄청 고민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부. 여가부 폐지를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다가 여야 합의로 무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가부로 와 있는데 여가부가 유명무실하고 무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보강하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취지 자체에 대해선 괜찮게 봤는데 이름에서 저희가 딱 걸렸습니다. 성평등부라……

대한민국헌법은 양성평등인데 여기는 성평등이다. 즉각적으로 미국이 빠져 있는 거대

한, 아주 위험한 사회적 논란을 저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남성·여성·중성으로 구분하고 또 동일하게 소수자를 배려하다가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게 해서 사회적 문제가 커다랗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가 자녀가 성전환수술을 한 것을 계기로 진보 정부를 반대하고 보수 정부를 지지하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수주의자지만 그 부분은 보수주의자여도 오히려 실천을 해야 보수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소수자를 우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도 되겠나? 그것은 정치 자체가 안 될 걸로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이게 굉장히 첨예한 논쟁일 수 있는데 그 논쟁을 제목을 바꿔서 스리슬쩍 대한민국에 수입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안 그래도 갈등과 분열이 심각합니다. 지금 그것도 치유 못 한 상태에서 다시 젠더 갈등을 수입하는 것 아니냐.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의심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 진짜 다양한 성을 존중하는 성평등으로 진화해서 정책이 나오고 논쟁이 촉발되면 저는 이재명 정부에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깊이 토론하고 숙고했다는 얘기 못 들어 봤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있고요. 제가 이미 얘기드렸지만 조금 더 보강드려야 되는 점이 뭐냐 하면 기왕에 정부조직을 바꾼다면, 이번의 정부조직이 작은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폭 개편이 아니고 이것은 대형, 아무리 축소해서 봐도 중대형급입니다. 이것 상당히 폭넓은 개편인데 이때 되면 정말 우리 시대의 필수적인 관점이 투영이 돼야 됩니다. 인구문제, 인구문제 다루는 정부조직 개편은 왜 안 온 겁니까?

이것은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작년 7월에 제안을 했었어요, 인구전략기획부.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걸 만드시든지 저처럼 경제기획원을 만들면서 인구전략 기능을 집어넣으시든지 그런 게 있으셨어야지요. 정부조직 개편안 어디에 봐도 인구문제 없지 않습니까?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언급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인구문제는 그걸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기획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을 또 한번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저블 핸드, 인비저블 핸드(invisible hand)하고 비저블 핸드 그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조업을 만들고 수출을 하고 민주화를 즐기고 이런 번영과 자유를 누리는 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저는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미동맹의 주춧돌을 놓았기 때문에 한반도가 중립화되었고 7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산업화에 도박을 할 수 있었고 그 도박이 성공했고 오늘의 번영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진영의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은, 결단은 오늘날 대한민국 5000만의 번영의 시작점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한미동맹은 뭐냐?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은 거냐? 맞지요. 단순히 그거냐?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으로 철저히 갈렸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소련이 탄생했고 중국이 공산화됐고 북한이 공산화됐습니다. 그 공산화의 점령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중립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미동맹으로 본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세계 전략을 통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번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시대는 어떤 세계 전략을 갖춰야 됩니까? 저는 간단한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났을 때 저희는 수출하는 제품 자체가 없었습니다. 60년대 찾아보니까 홍삼, 가발, 돼지 곱창이든가 하여튼 몇 개를 수출하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대충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950년대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수출하고 있고 이제 제약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과 중동, 미국 등을 다녀 보면 비즈니스맨들은 외롭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외교관 열심히 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권 잃어버리면 영사에게 연락합니다. 영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사건도 몇 번 터졌었지요. 영사가 차갑게 대했다고 해서 난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수동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세계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품이 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연구해야 됩니다. 남미 시장을 연구해야 되고 북미 시장을 연구해야 되고 유럽 시장을 연구해야 되고 거기서 인맥도 쌓아야 되고 이번처럼 대미 협상의 문제가 터지면 저희가 축적해 온 지식과 인맥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런 기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세계 전략을 짜서 한미동맹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다음 버전으로 이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미 협상의 문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이 무역의 전략을 다시 짜야 될 때 경제기획원 같은 비저블 핸드를 다시 만들고 동시에 외교부를 국무부처럼 세계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처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게 어떠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게 정부조직 개편에 꼭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조직 개편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설명드리고 있는 게 공직자 사기 문제입니다. 람보르기니, 포르쉐 그 어떤 슈퍼카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사기는 에너지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싱가포르 공무원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덜 받았겠습니까, 자질이 안 좋겠습니까? 극심한 정치 변동 속에서 툭하면 부역자로 몰리고 툭하면 내쫓기고 그러니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낮아진 사기 속에서 내 부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정부조직 개편이 한 줄에 통과됩니다. 입장 바꿔서 그 사기가 높을 걸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하고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핵심 소명 중에 들어 있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 사람은 부역자인지 아니면 헌법에서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에게 봉사한 건지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1급 이상은 아예 정무직으로 하는 것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선을 그어서 그 밑에는 보호

하고 특별히 어떤 일이 없으면 공직자들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수평적 정권교체는 했지만 평화적 정권교체와는 아주 멀어져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진출해서 딱 한 가지 고치라고 하면 이거 하나만 고쳐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정권은 교체되는데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데 정권을 교체하면 뭐 하겠습니까? 평화적 정권교체 이거 하나만 해도 소원은 없겠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휩쓸리는 사람이 공직자들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으로 뛰어도 역모션이고 오른쪽으로 뛰어도 역모션이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답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복지부동입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이 섭리가 팽배합니다.

제가 10여 년 만에 국회를 통해서 공직에 복귀했는데 후배들 얼굴을 보니 참 미안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저 스스로 힘들었지만 남아 있었던 후배들은 사기 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 야당은 견제 입장에서 지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우선 여당에 있습니다.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정부조직부터 열흘 만에 개편해 버립니다. 그냥 통과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가 낮아질 것이다, 처우 개선과 경력 개발과 인생 발전에 비전이 함께 녹아야 한다, 이런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면 저희가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추상적으로 기후에너지부, 그런 것 없이 검찰 해체, 그런 것 없이 성평등부 발족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공무원 얘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이 하도 일을 잘한다고 언론에 소개돼서 제가 예전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공부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공부했는데 비법은 딱 2개입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첫째 정치적인 중립, 둘째 민간 수준의 처우, 딱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가 잘돼서 민간 기업의 월급이 올라가면 공직자 월급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치 자체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중립만 잘 지키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돈 속에 있고 민간의 급여가 올라갈 때 공직자 급여는 느리게 올라갑니다. 이제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과 경쟁하는 상황까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직사회를 돌보지 않고 싱가포르 공무원과 계속 비교해 대는 것은 그만해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을 주고 동일한 결과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조건을 주고 동일한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문제 빠졌습니다. 세계 전략에 대한 고민 없습니다. 공직자 사기 문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정부조직 개편안 토론하고자 했는데 토론 자체가 없이 열흘 만에 통과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그린 그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가져오신 정부조직 개편안인데 이거는 제가 누구랑 상의도 않고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냥 판정한 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잘하신 것도 있다니까요.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만드는 거 잘하셨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허청, 지식재산처로 만든 거 잘하셨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로 하는 거 이거 해야지요. 대한민국 발전시킨 게 공학도들 아닙니까? 과학기술 아닙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세요.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차관을 별도 신설한다,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왜 토론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통행 시키십니까? 제가 관련 상임위에 배치돼서 있는 건 아니지만 행안위에서 볼 때 이거는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아니에요, 이 다섯 가지 정도는.

딱 하나 걱정은 통계청인데 데이터하고 통계가 등치되지 않거든요. 통계는 데이터이지만 데이터는 통계는 아닙니다. 데이터라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차용하신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은 들었습니다. 왜냐? 의료데이터, 금융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요즘 우리가 데이터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언어에 혼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거 갖고 할 수는 없는 얘기이고 좋은 취지니까……

통계청, 특허청, 고용노동부, 중벤부, 과기정통부 이거 합격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적 결례를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 토론은 해야 된다 이 단서는 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바꾼 것, 이거는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토론 자체를 안 해서 제가 채점 거부라고 썼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것, 아니 이것도 1년 후에 답을 가져오시겠다고 하고 간판부터 바꾼단 말입니다. 선신구폐, 이사 갈 집을 짓고 기존의 집을 허물어야 된다, 이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채점 거부합니다.

그리고 낙제가 4개입니다, 낙제가 4개.

정부조직 바꾸는 것 중에 경제부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오늘 금융감독위원회 물론 빼셨지요. 그런데 이거 3개는 아까 제가 표로 보여 드렸지요?

아까 그 표 잠시 띄워 주실까요?

아니, 김대중·노무현 때 해서 문제가 있어서 바꿨는데 똑같이 돌아가고 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찬성합니까? 낙제입니다.

다시 종합표로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그렇고.

또 다른 낙제가 여성가족부 성평등부 바꾸는 것, 이거 이렇게 스리슬쩍 해도 되는 건지.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주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났던 사안인데 또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운동, 진보운동, 보수주의 모두 다 지금 미국과 연동돼 가지고 미국의 움직임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바꿔서 스리슬쩍 수입하겠다면 이 사회적 갈등이 크고 이렇게 분열이 큰 상황에서 이게 될 말이냐. 이거 낙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낙제 4건, 퇴장 1건, 방통위가 퇴장이지요. 이거는 헌법을 빙자한 편법입니다. 이거는 퇴장이지요, 경기에서 아웃돼야 돼요. 낙제 4건, 퇴장 1건, 채점 거부 3건, 합격 5건 총 13건 들고 오셨어요, 제가 채점을 해 봤는데. 그런데 토론 생략, 상임위 토론 생략, 열흘 만에 통과. 무제한토론 안 드리면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인구문제, 세계 전략, 공직자 사기 문제는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관점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게 3건입니다.

무제한토론이 24시간만 하는 게 아쉽습니다. 이 정도 건이면 무제한토론 일주일은 해야 논점 거르고 그리고 여야가 한번 합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또 야당은 무제한토론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일방 통과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왜 일방통과가 되느냐,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느냐. 특검법 연장을 약화시키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여야 합의를 추진했는데 그 여야 합의가 하룻밤 만에 박살 났다, 사라졌다. 왜 그러느냐? 강성 지지층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강성 지지층과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연장하고 확대하셔도 별 피해가 누적되는 게 없습니다. 이미 3개 특검법이 통과할 때 슈퍼 특검이었습니다. 초유의, 최강의, 최다의 특검이었고 저희는 압수수색까지 다 당했습니다. 그 특검이 한 달 더 연장된들, 검사 숫자가 몇 명 더 는다 한들 저희한테 오는 실체적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을 합의해서 토론하자 해서 저희는 그 취지에 동의해서 합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검법을 합의해 줘도 되나? 저희 스스로도 처음에 굉장히 헛갈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등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 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거절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협치의 명분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도 과감히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 협의 처리 시도해 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부조직 개편 일방 통과시키고 토론 다 생략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경계하며’라는 칼럼입니다.

‘찰리 커크 암살의 원인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이다. 보수와 진보 극단적인 대립, 검찰 해체, 특별재판부 등 여당은 위헌 논란을 무시한 강행을 하고 있다. 정치를 살릴 길은 국민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잠시만, 제가 자리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설인데요, ‘강성 지지층 포로 된 여야, 협치로 국민 안심시켜라’.

여당 강경파 반발에 특검 합의도 파기, 야당은 아스팔트 우파 결집 행보를 우려한다, 내우외환의 시기에 여야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칼럼입니다.

좀 읽어 보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며 심각한 정치 실종 사태를 빚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이 파기되는 과정은 강성 지지층에 볼모로 잡힌 여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어제는 정청래 대표와 회동하면서 사실상 강경파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 줬다. 투톱, 즉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당 내홍이 봉합되는 수순일지는 몰라도 어렵게 이끌어 낸 여야 합의가

강경파 반발에 14시간 만에 뒤집히는 속 터지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집권 여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마땅한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야 합의 파기와 정부조직법 일방 통과의 배경을 사설에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강성 지지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민주당이 대깨문,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이리저리 마구 내둘리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마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당 안팎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여권 성향 유튜브 권력의 영향력을 비판했다가 십자포화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작은 쓴소리도 못 받아들이는 경직성도 강경파 눈치를 보기에 빚어진 현상이다.

야당도 도긴개긴이다. 국민의힘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우파 강경 세력에 당의 진로가 좌우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은 지난 대선 전후 세력을 급팽창했고 당 지도부 선출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씨가 담임목사인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손 씨는 아스팔트 우파의 핵심이자 반탄 집회 주도자 중 한 명이다. 중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강성 지지층 결집만 노린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강성 지지층에 포획이 된 여야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관찰하신 칼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다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무엇을 동의하냐 하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크고 그 목소리에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이것은 저의 추론입니다—정치는 선거를 겪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메시지를 던지게 되고 때로는 정치적 대립을 하면서 더 선명하게 입장을 대척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층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런데 그 지지층들은 서로 극단적으로 대척화된 메시지만을 계속 접하기 때문에 지지층은 더 극단화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지층이 단단해지고 강성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 문제는 그 강성 지지층의 강성 목소리가 이제는 정치인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리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정치인이 만들어 낸 메시지가 정치인을 단편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구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여야 강성 지지층 모두한테 문자폭탄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합리적으로 토론하지 못하는 이유, 여야 모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슈퍼 특검을 연장하는 이유, 그저 둥둥둥 떠가는 이유, 이것은 강성 지지층의 문제입니다.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알고리즘과 정치 양극화를 다룬 사설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정치 양극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상당히 눈에 띄는 제목이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졌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견을 더 양극단으로 몰아가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알고리즘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규제와 함께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현상을 알아봐야 한다.

추천 알고리즘의 부작용을 설명할 때 흔히 등장하는 용어가 정보 여과 현상과 에코 챔버이다. 정보 여과 현상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을 소비하며 다른 관점의 정보를 차단하는 현상이다. 이 용어는 엘리 프레이저가 그의 저서 '생각 조종자들(The Filter Bubble)'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반면 에코 챔버는 비슷한 의견이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특정 관점이 점점 더 강화되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상호작용하여 더욱 극단적 의견을 형성하게 되며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한다".

이 칼럼은 지금 저희 SNS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에서 개인의 성향과 선호도에 맞춰서 입맛에 맞는 뉴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는 그 문제점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인데, 저는 국회에 와서 느끼는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글로벌한 문제이다. 왜냐?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한 문제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직 문제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게 새롭게 탄생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기술이나 현상은 문제가 누적되고 터질 때까지 잘 인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거론드리는 문제는 이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도 이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은 저희의 지지자들, 유권자들, 국민들보다는 정치의 내막, 돌아가는 얘기를 조금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강성 지지층이나 저희의 적극적인 충성 지지층께서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때 이 문제는 더욱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가장 구체적인 폐해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합의 파기 속에서 일방 통과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기사를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재밌게도 해법의 관점도 알고리즘으로 찾고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이나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담은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미국 LA타임스의 실험이 대표적이다. LA타임스는 독자들의 확증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실험을 시작했다. 특정 주제의 온라인 칼럼을 게재할 경우에 AI가 이 글에 대한 반론을 댓글 형식으로 달아 준다.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서 독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아주 합리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0개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진실이 존재한다는 게 진실인데 4개의 진실만 보고 또 오른쪽의 4개의 진실, 왼쪽의 4개의 진실만 보면 각자 다 진실을 보고 있지만 10개의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4개의 진실

속에 살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걱정을 시작했고요. 이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있는 300명의 동료 의원들뿐입니다.

국민들께는 뉴스 전문채널이든 아니면 공중파 뉴스 시간이든 결국 한 줄의 뉴스, 한 줄의 논평, 한 줄의 화면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보면 저희가 기존에 봤던 사실 위주의 내용이 계속 들어오고 확증됩니다. 여기서 균형감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SNS를 접하고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균형감을 발휘하실 시간도 없고, 특히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진실, SNS에 알려진 것과 SNS에 돌아다니는 것과 일반 언론이 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균형적 관점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파력이 약하거나 혹은 정파의 생각과 다르거나.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가 획일화되고 집단사고에 갇혀 가고 있고 그 결과가 특검법 연장을 축소하는 대신에 정부조직법을 합의하는 이 합의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사를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사용한 행동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방안이다. 유튜브의 경우 사용자가 설정 기능에서 본인이 과거 시청한 영상을 삭제하면 추천 영상의 방향성이 사라진다’.

이 말은 저희가 계속 같은 진영의 뉴스만 보기 때문에 편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존의 과거 데이터 접속기록을 삭제하면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어떤 경향성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방식이 유효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러한 방식까지 이미 제기되고 있을 만큼 이 상황은 진실로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부조직법도 지금 토론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에 있고 저는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양극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을 알아보자. 특히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확증편향을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자. 첫 번째 방법은 AI 기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정보 소비의 편향을 시각화해 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자신이 편향된 정보를 얼마나 자주 소비하는지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소비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방안은 특정 구조를 가진 의사결정 알고리즘과 의사결정 이후 상황에 대한 AI 예측 도구를 정당이나 사회단체 조직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구조화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도구로는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정책이나 행동의 여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과 위험 요소를 짚어 준다’.

첫 번째 방안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편중된 정보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덜 편중됐는지 시각적으로 보여 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금 정보 소비 분포를 인식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체 조직의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그리고 그 의사결정 이후의 상황에 대한 예측을 AI가 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사결정과 예측이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예측해 봄으로써 우리의 의사결정이 그룹사고에 들어 있을 때 그 장단점과 위험 요소를 찾아 준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결국 기술이 가져온 문제를 기술로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적극적인 제안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기사인데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되었습니다.

제가 정파적으로 민주당이 정부조직을 망가뜨려서 나라를 망가뜨린다, 망하게 한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합격점을 드렸습니다. 5개 정도 통과시킬 만합니다. 취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셨으니까 통치철학을 세워야지요. 그리고 통치철학에 대해서 결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선거로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위험해서 채점도 못 하겠고 한 가지는 아예 퇴장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몇 가지는 도저히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무리 제가 객관적이라 한들 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니까 아마 좀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파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매의 눈으로 매섭게 보기는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다면 저의 이런 토론이 반향을 얻어야 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저의 답안지는 누가 토론해 주실 겁니까? 민주당에도 경제전문가 경제관료 출신도 계시고 검사 출신도 계시지 않습니까.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는 원 플러스 원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늘어지게 발목을 잡아서…… 윤석열 정부는 넉 달 걸렸습니다, 3개 하는데. 그런데 저는 원 플러스 원이니까 두 달 제안드리는 거지요. 13건을 두 달에 3건을 넉 달에. 이 정도면 정파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조차도 정파적으로 보시면 또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피드백을 요청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는 뜻은 최근의 국회 상황으로는 내일 오후 한 7시 전후로 일방 통과시키신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밤에 좀 더 열심히 일단 설명드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안도 기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AI를 활용해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는 방안이다. AI는 훈련이나 교육 도구로서도 강력하다. 토론이나 의사결정에서 자기주장이나 편향대로만 대응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AI 챗봇과의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좀 흥미롭기는 한데, AI를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훈련한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것까지 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래도 뽑혀서 왔는데 저희는 비판적 사고가 날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단사고에 묻혀 가는 것은 좀 아니라 보고, 이 알고리즘 구하면 제가 한번 추천드릴 테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한번 해 보시지요.

‘네 번째 방안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 AI 추천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에코 챔버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AI는 이를 자동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뉴스 추천 도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진 기사나 논평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는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첫 번째 반대뉴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다양한 관점을 추천하는 AI 기술을 쓰자 이런 건데 이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즉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존재할 때야 우리는 AI 시대에 걸맞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기술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디지털 기술이 정치를 극단으로 가르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다시 연결과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책임과 과실은 인간의 몫이다’.

상당히 묵직한 마무리 멘트로 끝나는 기사인데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정부조직법 무제한토론 개국 이래 처음 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1호 국회의원이 저라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걸 무제한토론하는 게 맞나,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최선 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단 3개 꼭지입니다. 재외동포청·국가보훈부·여성가족부, 3개 제안해서 네 달 걸렸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 걸렸던 겁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사실 그게 발목 잡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건에 열흘입니다. 딱 10일입니다. 이거는 과속입니다. 당연히 졸속입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 또 소개해 드려야 하는 뉴스들이 있는데 제가 긴 버전으로 하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천천히 찾겠습니다.

짧은 버전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민주당한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학과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방법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한 정치인들이 모여 창당한 1955년의 민주당을 그 기원으로 삼고 있다’. 저도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아마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 당의 명칭은 정치 상황에 따라 수없이 바뀌어 왔지만 민주라는 단어는 열린우리당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언제나 정당의 이름으로 유지해 왔다. 그만큼 민주당 계열 정당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정당의 핵심 정체성이자 가장 소중한 정치적 명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우려가 드는 까닭은 세계 여러 곳에서 민주주의 퇴행을 겪은 나라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놀랄 만큼 비슷한 특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그게 단지 민주당의 특정 행위들이 문제라서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퇴행 현상의 동일한 패턴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가 퇴행한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보다 사법부에 대한 공세이다. 한 정당이 선거를 통해 의회 내 압도적 의석과 강력한 행정 권력을 장악하면 그 힘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 이러한 공세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늘리고 그만큼 자기편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나 사법부를 공개 비판하고 신뢰 하락을 명분으로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변경해서 별도의 법원을 만들거나 판사 임명이나 평가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베네수엘라·튀르키예·헝가리를 비롯한 민주주의가 퇴행한 많은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남미 사례를 소개하는 데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저는 훨씬 더 위대하고 높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칼럼이 지적하는 대로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했던 남미 그리고 유럽의 튀르키예·헝가리 같은 나라들, 이런 곳에서 나타났던 패턴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강하게 견제하고 저항하는데 지금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비판, 기존 법원을 우회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 대법관 증원과 정당 추천 인사에 의한 판사 평가 추진 등은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모두 이들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런 일들을 추진할 때 이들 정권은 실패한 쿠데타나 경제·안보상의 심각한 위기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 또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노골적 억압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 등의 방식으로 언론을 규제하라는 방안까지도 비슷하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개별적인 비판, 정치 공세 이런 걸 떠나서 저희 당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수직적 당정 관계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속에서 계엄을 예단할 수도 없었고 또 계엄 이후에도 정국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과 민주당의 폭주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과오를 계속 전파시키면서 그 뒤에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은 더더욱 큰 현재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이 칼럼은 제가 걱정하는 그 지점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야당일 때 거친 도전은 의기일 수도 있고 결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거칢은 폭주입니다. 독선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나 문제 등 때문에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계속 언급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민주주의는 군부 쿠데타나 대중 폭동 같은 격렬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붕괴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몰락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쓴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표현대로 점진적으로 감지하기 힘들게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만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위기의 상황을 이용하여 사법부를 자기편으로 유리하게 재편하겠다는 민주당의 시도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상에 바쁘시고 결국 대의제의 첨병에 있는 저희가 이런 견제와 균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 다시 읽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만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사법부를 자기편으로 유리하게 재편하겠다는 민주당의 시도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제가 세세하게 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국회에 나와서 일선의 현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예단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그 이후에 정국 관리를 분열 속에 실패한 거, 저는 철저히 반성합니다. 3년 만에 국정의 주도권을 내줬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철저히 반성합니다. 이제 민주당 차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와 언론, 지성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동안 이미 제왕적이라고 불린 대통령의 단독 입법과 단독 예산안 처리, 공직자 탄핵까지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막강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까지 장악한 정당이 사법부마저 사실상 통제하게 되는 상황을 두고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런 방안들이 정말 민주당의 뜻대로 다 입법화된다면 머지않아 V-Dem이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등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기관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칼럼은 민주당이 최근에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넘어서고 있고 밟아서는 안 되는 선을 밟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서 민주당에게 불편한 칼럼입니다. 저는 그런데 약이 입에 쓰다고 생각합니다. 쓴 약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가 바로 저희 보수 진영에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정권을 잡으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평가를 받게 돼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그 균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도적 자제입니다. 권한이 있다고 다 써서는 안 되고 권한이 있다고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특검법 연장 축소와 함께 합의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져 버렸고 단독 통과시키고 계십니다.

다수당의 권력은 제가 국회에 와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강력합니다. 제가 예전에 헌법을 배울 때 대통령중심제로 배웠는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다수당중심제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수당에 속해 계신 동료 의원들께서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정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든 또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든 그러한 조치들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는 이들 기관이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에 의해 입증될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이뤄 냈다는 우리의 자긍심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의 문화, 외교, 경제적 위상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후퇴와 국격의 실추는 결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역사의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로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볼 때 과도한 권력 집중의 시도는 언제나 국민의 큰 저항을 불렀다'.

저는 이 교수님이 정말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애정 어린 충심에 조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느냐?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저희의 문제는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고 국민들이 갈등하고 누구 하나 맘 편히 사는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는 정치적 내전이라고 하고 저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갈 정도입니다. 정치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기 위한 것인데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갈리고 경제가 성장해도 오히려 불행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춘기라고 불러 보고는 합니다. 성장통이라고 긍정적으로 소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춘기를 넘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넘어서 안정적인 성숙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려면 가장 실천적으로 시도해야 되는 것은 양극화된 SNS, 뉴스 소식으로 계속 멀어져 가는 지지층들에게 균형된 시각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균형된 시각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단초를 지니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균형된 토론과 입장을 전달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안 같은 것이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합격시킬 것은 빨리 합격시키고 낙제점은 다시 시험을 치게 해서 더 좋게 만들고 채점을 할 수 없을 만큼 답안이 부실한 것은 답안을 채우게 하고,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춘기를 넘어서 발전해 가야 하는 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개막식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정치학자들 앞에서 K-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제도 간 견제와 균형이고, 특히 사법부나 언론 등 심판기관의 제도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오랜 세월 그들이 소중하게 유지해 온 민주주의 수호라는 그들의 정치적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큰 위기로부터 어렵게 되살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제도적 자제와 신중함이 필요해 보인다'.

정말 따끔하고 불편한 지적이지만 정말 품격 있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민주당의 권력이 있습니다. 국회 의석수 그리고 대통령 임기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제 둘 다 없습니다. 민주당의 순서인데 정부조직 개편안이 일방 통과되면 그 일방 통과된 정부조직은 정부 여당이 운전하시게 됩니다. 잘될까? 한 다섯 개 정도는 잘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위험합니다. 제가 무한토론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기사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사설입니다, '근거 없이 음모론을 주장하고 그걸 근거로 청문회를 연다니'. 법사위 상황을 포착한 사설입니다.

'민주당이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강행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재판과 관련해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비밀 회동은 민주당이 이날까지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근거 없이 주장을 하더니 그 주장을 근거로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횡포일 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 회동 이게 참 일파만파가 됐었습니다. 근거는 없고 모호한 상태에서 폭로를 하신 의원들이 발을 빼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논의를 기반으로 지금 청문회를 다시 하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개인적으로 가깝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둔다는 이 보통의 상식이 대한민국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나서야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서 언론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예정에도 없던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를 안건으로 올려 30일 개최를 통과시켰다'.

제가 조 대법원장님의 이 발언, 이게 도화선이 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도 없고 판단의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까지 보셨을지, 이게 촉발이 됐을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내기 위한 청문회 계획서를 일방 통과시킨 것, 이것은 팩트이지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냥 쉽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서 빨리 사퇴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당이라고 이래도 되나? 당연히 안 됩니다.

기사를 다시 읽겠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여는 근거가 비밀 회동설이다. 그런데 이를 처음 제기한 친여 유튜브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넣지도 않았다. 이 유튜브 측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유튜브 방송 음성을 튼 뒤에야 유튜브 측에 제보 출처를 물었다고 한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대법원장을 비난하던 판사, 유튜버 등은 출석 대상이 됐다. 청문회 목적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일 것이다'.

이 언론 기사가 저와 비슷한 추론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청문회를 여는 근거가 비밀 회동설인데 이것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는 증인 명단에 없다는 거네요.

아, 이렇게 됐구나.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한 게 유튜브 관계자인데 그러면 그 유튜브 관계자는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유튜브 관계자가 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고 했는데 유튜브 음성을 국회에서 튼 다음에 제보 출처를 유튜브에 물었다고 하니…… 저희가 국회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너무 극단적인 의견이나 가짜뉴스 같은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내용이 오면 이것은 확인을 거친 것이냐, 팩트냐 하는 것을 보좌관들을 통해서 다 점검하는데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국회에서 시작했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고.

결국 언론의 추론은 저랑 같습니다.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비난하던 판사, 유튜버 등은 출석 대상이 됐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청문회를 결국 기획을 해낸 것인데 청문회의 목적은 대법원장을 비난했던,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대법원

장을 비난했던 판사와 유튜버 등은 출석 대상이 돼서 결국 청문회의 짜임을 보니 이것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일 수밖에 없다. 언론의 추론입니다. 저는 이 언론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기사 헤드라인 제목이 좋아서 소개할 만해서 오늘 가져온 것인데……

지금 국회 상황이 정말 이렇습니다. 참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이런 청문회까지 열면서, 이런 청문회를 할 시간은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할 시간은 없는 걸까요? 그게 제가 얘기한 강성 지지층과 극단의 정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지 판사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다. 국회가 재판 중인 판사를 불러 압박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횡포다’.

이것은 전 아직 잘 몰랐습니다. 지귀연 판사도 부르셨군요. 지귀연 판사가 불편해서 특별전담재판부도 시작하고 논란이 증폭이 된 건데…… 좀 맡겨 두십시오. 사법체계를 흔들면 결론이 나도 사람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 후과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내란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했을 때 믿기지도 않았지만, 아니 그럴 거면 김건희 재판특별부는 왜 안 만들고 채 해병 특검재판부는 왜 안 만듭니까? 편의에 따라 특검마다 다 하나씩 만들고 특검마다 하나씩 결론을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에서 인정한 단 하나의 예외는 군사법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은 별도로 돼 있고 각급의 법원은 대법원을 휘하로 하는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식전담재판부 등 전담재판부는 선례가 있다, 그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고 전담재판부는 괜찮다 이 논리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 제가 틀릴까 봐 조사를 해 봤는데 그것 또한 어폐가 있습니다. 지식전담재판부는 지적재산권 같은 하나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재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긴 재판부이고 이것은 특정 사건을 위해서 재판부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에는 과거 독재에 맞섰다는 민주화 운동 출신도 많다. 그런데 지금 보여 주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못지않은 폭주와 횡포이다. 민주당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다’.

제가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와서 겪어 보니까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말 위대한 유산은 그래도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면에서는 보수보다는 진보가 도덕적 우위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영삼 대통령을 통합해서 민주화를 통합한 정당입니다. 그게 민주화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입니다. 보수는 처음부터 민주화를 주도하고 기획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민주화의 도도한 물결을 흡수했다,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저희는 이런 도덕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민주화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자부심은 자부심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엄혹했던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를 향해서 투쟁하고 희생하고 핍박을 견뎌 내고 묵묵히 걸어온 것은, 그 유산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가 보수 정당에 있지만 그것은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그 유산을 잘 가꾸고 발

전시키십시오. 그 유산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국민기본권, 이 중에서도 가장 앞서는 건 국민기본권입니다. 요즘 국민주권 얘기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국민기본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기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삼권이 분립돼야 되고 법치주의가 발전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되시고 나서 절대권력을 가지고 나서 절대반지를 찬 사람처럼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받아서 삼권분립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세계관을 설파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질서를 만들어야 하고 질서를 문서화한 것이 헌법이고 그게 명예혁명, 마그나카르타서부터, 대헌장서부터 시작된, 영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간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희 보수 진영의 선배들은 산업화를 위해서, 경제 개발을 위해서 개발 독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저희가 먼저 시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민주화의 도도한 물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민주화의 도도한 물결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입니다. 정말 부러운 유산인데 그 유산을 잘 아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걱정할 뿐 아니라 언론, 학자, 지식인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권 박탈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지금 모호해질 수 있다 걱정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게 주호영 부의장께서 처음 지적하신 문제인데 찾아보니 이미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론회 한 번 없이 정부조직 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소개가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 특사경 체제 대대적 수술대 오르나'.

'2023년 기준 2만 604명의 특사경, 32개 부처·17개 부처에서 단속·수사, 지정 물론 수사 개시·지휘도 검사 몫이다'. 2만 604명의 특사경이 32개 부처, 17개 부처에서 단속과 수사 역할을 하는데 지정은 물론이고 수사 개시·지휘도 검사의 몫이다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검찰개혁 때는 지휘 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 중수청, 경찰 등 지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물론 바뀌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준비의 흔적을 못 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률상 특사경에 대한 지정은 물론 수사지휘 등까지 검사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사경은 2만 604명에 달한다. 2020년 2만 2031명보다 다소 줄기는 했지만 해마다 2만 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특사경은 세무, 식품, 보건, 산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다. 국세청은 물론 관세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2개 중앙부처에서 1만 4536명의 특사경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068명의 특사경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연도마다 다른 것은 세부적인 얘기인 것 같고 결국 2만여 명의—적지 않은 숫자가 아

니라 대단히 큰 숫자네요—특별사법경찰이 세무, 식품, 보건, 산림 이런 분야들에서 산림경찰, 식품 단속, 세무 단속 뭐 이런 걸 한다는 뜻인데, 이게 지금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개혁으로 그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될지 우려하는 칼럼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특사경의 지정에서 수사지휘 등까지 검사의 몫이라는 점이다'. 특사경 지정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것까지 검사가 한다는 뜻이지요.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해당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 10(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르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는 특사경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 관할지역 지검장,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직무 범위 내에서 방화나 실화, 살인, 폭행치사, 관세법, 자본시장법, 출입국 관리법, 특허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 보고해야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박탈된다면 현 특사경 체제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이 분리되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는 물론 지휘 권한까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기관 가운데 특사경을 지휘할 곳까지 새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제가 길게 읽었지만 결론적으로 특사경은 지금 검찰이 지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 지휘 권한까지 다 박탈, 어차피 돼 있는데 더 박탈이 되면…… 지금 특사경은 검사가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예 검수완박을 하면서 이 지휘권이 공중에 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세부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공소청이 설립될 경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서 검사를 대신해 특사경이나 특사경에 대한 지휘까지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경우 중수청이나 경찰의 업무가 더 늘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장관님 어디 가셨는데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을, 행안위에서 주호영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저희도 이런 입법적 사각지대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은 항상 1년간의 시행기간,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준비한다 이렇게만 계속 들었습니다.

선신구폐, 이사 갈 집을 정하고 옛집을 허물어야 한다. 1년 후에 허물어지는 것이 정해진 집 안에 남아서 성심을 다해 일할 검사와 수사관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그 피해는 사법 공백 속에서 국민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지금 이 칼럼이 지적하듯이 특사경에서는 더욱 대대적으로 불거질 수 있고, 특사경은 특사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특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식품·보건·산림·세무 등에서 일하는 행정공무원인데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단속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라 우리 생활 널리 포진해 있는 사법기능입니다. 이런 점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일방 통과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노동 분야 변호사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다면 향후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을 가질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에 있어 법적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사경은 단속이나 조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만 혐의 적용 등 법적 지식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수십 년을 시행 중인 특사경 체제가 수사력 저하나 지연 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경찰직무법이 1956년 제정·시행된 특사경 제도가 검찰개혁에 따른 지휘권 변동으로 다소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부드럽게 썼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아까 627개인가요 그 부칙에서 명칭 변경 문제랑 직결이 됩니다.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는 특사경을 이제 공소청이 지휘하는 건지, 중수청이 지휘하는 건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부칙에서 특사경에 대해서 어떤 부칙 개정을 했는지, 저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누가 읽어 봤는지 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법사위에서 혹시 읽어 봤는지, 식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읽어 봤는지, 노동을 다루는 환노위에서 읽어 봤는지, 산림을 다루는…… 복지위는 안 했지요. 농해수위에서 다뤘는지……

(○김도읍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 정부에 누가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한참 됐는데 장관님들 어디 갔습니까? 빨리 찾아오세요.)

정부 측 위원이 없네요.

이런 것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장관님도 화장실 다녀올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김도읍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참 됐다니까요. 이학영 부의장, 빨리 부르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김도읍 의원 의석에서 — 뭘 기다려요? 한참 됐구먼.)

지금까지 계시다 나갔잖아요.

(○김도읍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까지 계시다 나갔잖아요.

(○김도읍 의원 의석에서 — 한참 됐다니까요.)

저기 오시잖아요.

○박수민 의원 제가 이 대목을 좀 다시, 법적으로 아까 딱딱해서 전달이 잘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특사경 지정에서 수사지휘 등까지 검사의 몫이라는 점이다’.

특사경 이분들은 행정공무원입니다. 식품, 노동, 산림 이런 데 대한 전문성은 높지만 수사나 법 적용에 대해서는 지식이 약하실 수밖에 없지요. 이런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한다.

즉 특사경, 행정공무원 중에서 누가 특사경을 할지, 보건·식품·노동·산림 이런 단속을 누가 할지를 해당 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한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공소청장이 지명하는 건지, 중수청장이 지명하는 건지, 이게 토론이 된 건지 저희가 행안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날짜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한 한 달 더하기 한 달만 해도 이런 것 다 거를 수 있는데,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 의석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기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언급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 10에 따르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당연히 하겠지요. 지금 식품 단속 나갔던 분, 산림 단속 나갔던 분 이런 분들이 수사지휘를 자기 기분대로 하거나 자기 전문지식만 갖고 하면 법적 절차에 결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공소청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나요?

'범죄를 수사한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는 특사경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된다'. 아예 특사경의 관할 범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검찰과 조율해서 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직무범위 내에서 방화나 실화, 살인, 폭행치사, 관세법, 자본시장법, 출입국관리법, 특허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경우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박탈된다면 현 특사경 체제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이 분리되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는 물론 지휘 권한까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기관 가운데 특사경을 지휘할 곳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중수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수청은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중수청이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정하고 지휘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수사지휘는 못 하니까 수사는 자체 역량을 기르든지 중수청의 지휘를 받든지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국세청, 식품 단속, 보건 단속, 산림 단속 저희가 민생에서 많이 접하는 영역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다소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심을 걸고 진짜 세밀히 나름 본다고 봤는데 특검법은 이미 강력하기 때문에 크게 연장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으셨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법을 조금이라도 심도 있게 토론해서 제가 괜찮다고 한 부분 빨리 통과시키고 보강할 부분 보강하고 무리다 싶은 것 무리하게 좀 지연시켜서 토론해도 저는 그게 훨씬 국가적으로 좋았다고 봅니다.

진실 규명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지금 패착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묵묵히 재건해 가고 저희 고생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정부조직을 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저 화장실 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여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야당은 또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이 왜 생겼느냐? 저는 결국은 정치가 회복되지 못했고 강성 지지층에 저희 스스로 포획되고 있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은 이렇게 다루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국가의 근간이고 이것을 열흘 만에 다룰 수는 없다.

숫자적으로 비교해도 불편하시지만 윤석열 정부는 4건을…… 아니요, 3건이지요. 달랑 3건을 고치는 데 넉 달 걸렸다. 지금 13건의 대형 개편안을 열흘 만에 통과시키고자 한다. 숫자로 단순 비교드리면서 우리나라 정부조직 중에서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그림을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새벽으로 진입하시면서 힘드신 시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야기를 섞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말고 경제부처 변했던 것 있지요?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나온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대한민국 경제부처와 경제성장의 히스토리가 숨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오른쪽 끝부분이지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체제로 경제부처의 수장이 돼 있고 이걸 지금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시겠다는 건데 이게 김대중·노무현 때 했다가 한계가 있어서 바꾼 거고 정파적으로 볼 필요 없이 더 발전적으로 바뀌면 제가 반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때 바꿔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어 왔을 땐 이유가 있었거든요. 특히 중간에 문재인 정부 때 저걸 손을 잘 안 댔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2개입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치유됐기 때문이고 정부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해 봤자 별게 없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건너왔는데 이번에는 또 굳이 이걸 바꾼다? 뭐 바꿔야지요, 계속 변천해 오는 거니까. 그런데 바꿨을 때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느낌이 전혀 없다.

예전에 기획예산처는 너무 작아서 문제였는데 이젠 더 작아졌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작아서 금융위원회로 만들었는데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 간다. 재정경제부는 크기는 컸는데 권한이 없어서 작동을 잘 안 해서 기획재정부로 합친 건데 그 비슷하게 다시 탄생을 한다, 똑같이.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총체적으로 낙제점이고 급히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동돼서 금융감독 체계도 보면 지금 금융감독원, 저건 그림을 잘 분리를 못 했는데 현재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2개로 쪼갠다는 것 아닙니까? 저게 호주에 딱 하나 있는 사례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에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감원, 신용관리기금과 보감원을 합칠 때는 외환위기였어요. 그래서 분산된 감독 기능을 통합해야지만 우리가 외환위기 징후를 미리 견제하고 건전성 감독을 해서 위기를 막는다 해서 금감원을 만든 거고 그때 저것 3개 합치느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3개 기관이 통합에 반대해 가지고 모든 노조들이 반대하고 저게 엄청나게 여의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금감원 통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당시 분들은 다 압니다.

정말 외환위기였으니까 저게 통합이 됐지, 외환위기가 아니면 다 금융기관의 갑들인데…… 은행을 감독하는 은행감독원, 증권을 감독하는 증권감독원, 보험을 감독하는 보험

감독원 저게 하나하나가 다 막강한 갑 중의 갑 기관들인데 저것 3개를 통합한다는 게 외환위기나 터졌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으로 그나마 지금 역대 정부를, 김대중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까지 왔는데 이걸 다시 2개로 나누겠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유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융감독 기능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뗀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 보이는데 원래 현재 금융감독원이 하는 핵심 기능이 금융 건전성 감독, 자금 흐름 감독, 소비자 보호 딱 이런 정도 축입니다. 이런 정도 축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면 금감원 안에도 증권·보험·은행, 금융소비자보호원 안에도 증권·보험·은행 이렇게 또 세분화될 거예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시지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위인설관이다, 금감원장 강력한 후보가 2명인데 결국 1명이 서운하니까 둘로 쪼개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터지니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복 하고 조기 들기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기능은 손대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가 아니지요. 더 좋게 바꾸세요. 저는 제안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꾸시든지…… 그래서 제가 낙제점을 드린 건데 이걸 과거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다가오실 부분이 좀 있을 거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박정희 정부의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 체제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4·19 때인지 4·19 터지고 민주당 정부인지 아니면 자유당 이승만 정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승만 정부 후반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경제부흥부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6·25 끝나고 50년대에는 원조경제입니다, 원조경제. 그러니까 유엔에서 원조가 들어와야 경제가 돌아가는, 밀가루가 풀리고 설탕이 풀려야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저도 아버님한테, 돌아가신 선친께 들은 얘기인데 저희가 다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브 미 초콜릿, 기브 미 껌. 그 당시 어르신들은 길에서 미군이 지나가면 초콜릿과 껌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가 1950년대고 그때가 원조경제지요. 유엔에서 주로 들어왔고 또 미국 구호단체, 유럽 구호단체들에서 원조가 들어와서 그 원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형성하던 시기가 50년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굉장히 엘리트들을 집합한 경제부흥부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자유당 마지막 시기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4·19 정권일 때도 있는데 그때 신현확, 이한빈 이런 경제부처의 굉장히 어떤 종주들이시지요, 태두들이신 분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런데 그때 5·16 군사혁명이 딱 일어나고 박정희 정부가 설립되고 어느 시점, 처음부터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역사를 추적해 봐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되지 않고 저도 전해 들은 얘기니까 확인은 추가로 해 보시고요. '이것 이럴 줄 알았으면 혁명을 괜히 했다',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혁명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켜 보고 뭐를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남한은 농업경제 위주였고 그래도 불하, 일본에서 남겨진, 넘겨받은 그런 시설은 압록강 수풍댐이나 북한의 중화학

공업이 좀 있었습니다. 남한에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60년대 시간이 가면서 농업자립 이런 것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 당연하지요. 저희가 쌀 자립해 봐야 에너지도 없고 식량도 부족하고 쌀만 자급할 뿐이지 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도박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전체를 걸고 담보로 외채를 끌어들여서 이제 중화학공업을 기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1970년대 산업화지요. 거기에 국가적인 베팅을 하는 거고 그때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천명하지요. 그래서 유신이 독재냐, 개발독재냐 이것이 역사적 공과가 뭐냐 논란이 큰 것이지요. 그러나 산업화에 승부를 걸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성공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절대 부인할 수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산업화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첨병의 조직으로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냐?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재무부를 만들고 저기 나타나지 않지만 이번에 기후에너지부와 일종의 조직 흡수가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모태인 그 당시 산업부지요, 상공부였습니다, 상공부가 출범하지요. 그래서 경제 관료의 3대 축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그래서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경제 전체의 전력을 어떻게 할지, 구로공단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어떤 산업에 더 돈을 배정해야 될지 전체를 기획했기 때문에 전체를 기획하는 비저블 핸드, 인비저블한 핸드가 움직이는 시장경제 성립 전에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을 만들어 내는, 산업을 만들어 내는 국가자본주의의 리더 역할을, 설계자를 경제기획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로 인재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동시에 재무부에서는 금융, 세제, 국고 이런 기능을 다 한 겁니다. 여기는 뭐냐? 저 때 크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경제기획원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예산을 다룹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돈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재정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은 실제 편성해 보고 심의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은 다 계획입니다. 내년도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지 실제 돈을 만져서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계획.

그래서 실제 현금을 만지지 않고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내년도 재정 집행을 기획하는 예산 기능을 경제기획원에 주는 겁니다. 저기가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기획원의 이름이 보여 주듯이 대한민국 기획실인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재원을 투입해야 되고 어떤 공간, 지역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걸 결정해 나갔고……

그런데 재무부는 뭐 하냐? 그런데 실제 현금을 다루는 업무가 있어요. 세금이 들어와야 되고 세금을 집행할 때는 국고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게 공공자금뿐 아니고 민간의 자금까지도 관리하게 한 겁니다.

민간의 자금이 뭡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대한민국의 자금이라는 것은 모두 다 재형저축에 투자해 가지고 그때 재형저축이 18%까지 갔지요. 그러니까 예금을 총동원한 건데 그 예금을 관치금융을 통해서—지금 사라졌지만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등이 있었지요—그런 은행 등을 통해서, 관치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배분해 나갔습니다.

즉 경제기획원이 짠 경제 기획과 예산을 자금 면에서 집행해 낸 게 재무부입니다. 민간의 자금 금융, 국가의 자금 세제와 국고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양대 산맥이 발전했고 그 내에서 실제 산업단지를 발전시키고 중화학공업, 석유화학,

자동차, 플랜트, 철강 이런 거를 직접 담당하는 과들은 상공부가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공직 예전에 할 때 상공부는 산업을 직접 다루니까 화려하고 재무부는 자금을 다루니까 파워풀하고 경제기획원은 경제 전체를 총괄하니까 아너러블(honorable)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개발독재 시대를 갔지요. 그런데 개발독재라는 게 지금 중국이 보여 주는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인데 국가자본주의가, 정부가 개입해서 독재로 발전하는 경제라는 게 발전 속도가 잘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잘하면 대단히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잘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례로 개발독재, 국가독재를 통해서 발전한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지구상에.

영국의 발전을 보고, 영국도 약간의 국가자본주의를 시작을 했지요. 해상무역을 독점화하면서 국가자본주의를 시작했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터졌고 그것을 벤치마크해서 자국 산업 발전에 이식한 나라가 있지요. 바로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화도 해상무역을 독점화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고 그 산업화를 벤치마크한 독일의 국가자본주의, 일본의 국가자본주의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전후에, 해방 이후에 공부해서 따박따박 더 압축적이고 성공적으로 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다음에 그 과정을 걷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과 일본은 국가자본주의로 급성장을 하다가 국제 무역질서에서 미국하고 부딪혔고 영국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이 터졌고 무수한 비극을 겪고 나서야 이거는 전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자유무역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전후에 GATT 체제 그리고 요즘은 WTO라고 부르는 국제 자유무역의 질서가 탄생하고 국제 금융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IMF가 탄생합니다.

전후, 1945년 이후에 우리는 이 체제 속에서 살아온 것이고 이 체제 속에서 국가자본주의를 통해서 가장 급격히 발전하고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성공한 모델이 그대로 건너간 것이 중국인데 여기서 이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발전 과정, 한국의 발전 과정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후발자의 이점이 있습니다. 후발자는 앞선 사람의 시행착오를 소거하고 좋은 점만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압축적이고 빨리 성장할 수 있고 흡수만 잘하면 되는데 중국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경제사관은 한때 중국의 경제성장을 예술에 가깝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지점은 경제가 성장한 이후에, 나라가 부강해진 다음에 무역의 질서에 순응하느냐 도전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본과 독일은 도전을 했었지요. 그래서 미증유의 전쟁이 터졌었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저희는 순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국제 자유무역질서에 순응하면서 후발국이면서 3만 5000불까지 날아오고 인구가 5000만에 이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자부심의 중심에는 민주화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가장 훌륭한 유산으로 민주주의를 꼽는데, 민주화를 꼽는데 그게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됐느냐? 그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87년 민주화를 하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로 관리해 오던 개발독재체제가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에 없는데 상공부가 그때 자유체제로 풀립니다, 가장 먼저. 상공부가 어떤 상황이었었냐 하면 모든 산업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때 공장 공급가격을 상공부가 결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즉 치약의 가격이 얼마다 그다음에 TV 가격은 얼마다 이런 거를 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민간의 창의가 발전할 수 없지요, 개발독재는 쉽지만. 그래서 상공부부터 자유화가 되고 서서히 경제가 자유화되는데 급진적인 일은, 사실 김영삼 정부와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많이 파악을 안 하는데 저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 시대도 저거를 벤치마킹 많이 해야 됩니다.

일산과 분당의 주택 100만 호는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겁니다. 일산과 분당, 고양 이런 곳에 신도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어떨까요? 지방에 그만한 걸 개발했으면 되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고.

동시에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한 일이 정보화입니다. 정보통신부를 처음 만든 게 김영삼 대통령이십니다. 그때 정보통신부를 처음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100년 앞을 볼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 뭐냐, 두 개입니다. 정보화와 세계화 이 두 개를 꼽는데 그 두 개를 시작한 시점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장점들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 하고 있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영삼 정부 때 재정경제원이 탄생하는데 그 이유는 노태우 정부 때서부터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비저블 핸드, 보이는 손보다는 안 보이는 손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을 없애는 겁니다. 경제기획원을 없애면서 재정경제원을 재무부와 통합해서 탄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외환위기 때 대응하기에 조직이 좀 컸습니다. 일도 너무 많았고 장관 한 분이 예결위, 지금 아시듯이 예결위에 내내 출석해야 되고 그 예결위에 출석하시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대응해야 되는 연말 상황이 겹쳤었습니다, 그때.

지금 예결위에서 자리 이석하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외환위기 경험 속에서 부처를 쪼개게 되는데 그렇게 탄생한 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제가 30분 전에 설명드린 그 지점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좀 작았습니다. 기민하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이 너무 컸고 기획 기능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만큼 미래사회 전망을 하기도 어려웠고 기획 기능이 잘 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는 예산실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정답인지 100점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답을 찾아서 기획재정부를 통합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회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귀하실 때 과거의 문제점을 고쳐 가면서 회귀하시는 게 아니라 더 노출시키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기획예산처는 더 작아집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보다 지금 만드시겠다는 기획예산처가 더 작습니다. 작아서 문제였는데 더 작게 만든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실까? 최근에 저

희가 걱정하는 재정 포퓰리즘과 연계해서 다루기 쉽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 모든 토론을 생략하고 10일 만에 버튼을 누르시는데 저희는 그렇게밖에 걱정을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정 포퓰리즘만큼 걱정스러운 문제가 또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미래세대의 부담이고……

제가 토론회에 나가서 열심히 얘기하지만 저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 갖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 선배 세대들의 노력으로 저희 국가재정은 국가부채를 늘릴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국가부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국가부채를 늘려야 할 때 늘려야 하고 그 늘리는 이유는 늘려서 생산적인 것에 써서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를 통해서 공직에 복귀해서 작년에 보니까 대한민국 재정지출의 규모는 급증했는데 그 품질은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정파에 속해서 말씀드리는 비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도 기획재정부에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세출이 갑자기 600조 가까이 늘었는데, 국가채무도 매년 80조 90조 100조씩 찍고 있는데 국토부 사업, 노동부 사업, 농림부 사업을 지켜보니 이 사업이 그렇게 도움되는 사업인지 내가 모르겠다, 돈이 흩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문재인 정부 때 급팽창시킨 재정지출을 더 좋게 못 만든 겁니다. 줄이거나 그 퀄리티를 높였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상황이었다, 그때는 급하니까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절반 정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재정지출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방식이 굉장히 간명했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이라든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보는 곳들에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나면서 그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업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했고, 한참 나중에 했고 대부분 민간 융자로 코로나 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의 굴레가 작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국가부채를 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국가부채는 코로나 피해자 소상공인을 도운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업들을 그냥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급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획이 부실하고 그냥 돈이 흘러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6 대 4인가 7 대 3인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 6.5 대 3.5라 치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면 수도권에서 한 6~7이 걷히고 수도권 이외에서 한 3~4가 걷히고 이런다는 뜻이지요. 당연하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산업 허브는 경기도이고 수도권의 인구도 밀집돼 있으니 땅값도 높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실제 사용하는 기준, 세금을 걷는 기준이 아니라 사용하는 지출 기준으로 보면 역전됩니다. 한 60% 정도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40%만 수도권에서 사용합니다.

균형발전의 논리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6 대 4라는 그런 기준으로 수십 년째 지속적으로 써 왔다면 지방의 인구소멸과는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뭔가 집중해서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관찰을 하지 못했고 이런 개혁을 해내지 못했고 이런 집중화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민간의 융자를 얹었고, 그러면 그때 늘어난 국가부채는 어디로 간 겁니까? 수도권 이외에서 60% 사용하는 그 부분들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살린 것입니까? 지방소멸, 인구소멸은 이 시간까지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귀책은 그 잘못된 점을 포착은 했으나 잘 고치지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방 쪽으로 간 것을 규모화 있게 집중화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농림부, 국토부 그런 쪽에 많지요. 노동부 쪽에 나가는 일자리 지원사업들도 그것이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 혼자서 다 분석하고 지적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올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야당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공은 민주당께 넘어갔다고 말씀드립니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대에 누적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우리는 국가부채를 늘렸지만 정확히 타기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했지만 결국 또 그렇게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지출을 너무 늘려놨기 때문에 세입을 갑자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증가율은 꺾었지만 국가부채 자체를, 추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재정을 더 과감히 쓰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과감히 쓰셔도 되는데 그 과감히 쓰신 만큼 과감하게 지출 구조개혁이 돼서 생산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소모적으로 쓰면 소모적인 결과가 남습니다. 소비적으로 쓰면 소비적인 결과가 남습니다. 생산적으로 써야만 생산적인 결과가 남습니다.

이런 재정의 문제들을 고쳐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작게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도움이 될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쳐 나가려면 기획 기능이 탄탄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오히려 경제기획원급의 선임 부처로 좀 규모 있게 탄생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부 방식으로 탄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와 금융부처 개편은 토론과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도 토론하지 않았고 그 어디서도 공청회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과거에 경제부처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부처 관료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사기는 낮아져 있습니다. 헌법의 민주적 통제 속에서 순치되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싱가포르 공무원처럼 유능한 공무원, 청렴한 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요청합니다.

기대가 있으면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하고 공직자 사기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정부조직 개편, 찬성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정부조직 개편의 단초가 된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 새로운 칼럼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도 정치색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권하는 세상, 정치 양극화에 빠지다’.

‘시사기획 창’은 신년기획으로 2부작 다큐멘터리 ‘알고리즘 인류’를 방송했다. 1부 ‘현실을 삼키다’ 편에서는 중독경제의 실상을 다루었고 2부 ‘민주주의가 위험하다’에서는 정치 양극화를 다루었다.

“1부는 소셜미디어에 긴 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비추며 시작한다. 한 해 온라인쇼핑 규모가 200조 원에 이른다. 온라인쇼핑이 이처럼 급성장한 것은 소비자 개인의 특성을 정교하게 파악해 끈질기게 달라붙는 광고 덕분이다.

플랫폼과 앱은 사용자가 더 많은 시간을 머물게끔 설계되어 있다. 유튜브는 한번 관심을 보인 영상과 관련 있는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한다. 그 속에서 발생하는 광고, 구독, 판매 등의 수익은 고스란히 빅테크 기업의 몫이다.

김병규 교수의 책 ‘호모 아딕투스’에서 설명하듯 20세기 초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귀해서 물건을 만들면 팔리던 제품경제의 시대였다. 20세기 후반은 생산기술이 흔해지고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했던 관심경제의 시대였다. 지금은 소비자에게 디지털 중독을 일으켜 돈을 버는 중독경제의 시대이다. 여기서 중독은 단지 비유가 아니다. 뇌에는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보상회로가 있어서 자극을 받으면 쾌감을 느끼고 그 자극을 다시 얻고자 한다. 보통 보상회로의 자극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스마트폰은 아주 쉽게 자극을 주어 중독을 일으킨다”.

아직까지 정치 얘기보다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는 SNS가 가져다줄 수 있는 중독경제, 광고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서 끊임없이 소비를 하게 되는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중독경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중독은 그냥 가져다 쓴 표현이 아니라 뇌는 실제로 보상받을 때 활성화되는 회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극을 받으면 쾌감을 느끼고 그 자극을 다시 얻고자 하는 메커니즘인데, 여기에는 이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스마트폰은 그것을 아주 쉽게 기계화할 수 있다는 그 원리입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스마트폰 사용이 보상회로를 자극할까? 스탠퍼드대 의대 중독치료센터 소장이자 ‘도파민네이션’의 저자인 애나 렘키는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때 즐거움을 느끼도록 진화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감과 소통도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중독을 일으킨다고. 애나 렘키가 예전에는 의사들이 담배 광고에 나왔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담배의 중독성을 모를 수 있었냐고 의아해하지만 100년 뒤에는 지금 인류가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닥터프렌즈’의 의학의 역사 마약 편에서 아이들에게 아편을 진정시럽으로 먹였던 흑역사를 보았을 때만큼 아찔하다”.

이 부분은 제가 공감도 되고 이것을 또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저도 알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계해야 될 대목들은 나옵니다. 과거에 담배의 중독성을 실제로 몰랐지요, 저희는. 그리고 아편에 대해서도 경계심이 낮았기 때문에 아편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전쟁까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술이고 그 속의 알고리즘 또한 얼마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계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공감과 소통뿐이 아니라 공격과 혐오도 부추긴다. 이 역시 진화론적으로 설명된다. 집단 내 힘을 합쳐 다른 집단을 공격하던 부족이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도록 인간이 진화했는데 소셜미디어가 그런 쾌감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유럽 중세의 풍습을 재현하는 마을을 보여 주면서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던 시기가 중세의 한복판이 아니라 근대 과학의 발전과 개혁적 성취가 일어났던 16세기 르네상스 전후 200년간이었음을 짚는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속도의 변화를 겪으며 공격성이 높아진 결과였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마녀사냥이 일어나는 기전과 유사하다.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은 중독과 별점테러 등 피해를 낳지만 비윤리적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낳은 더욱 심각한 폐해는 따로 있다. 바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과격성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상의 회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던 근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가 알고리즘을 통해 지금 민주주의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2부에서 펠로시 집 괴한 침입 사건, 의사당 점거 사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음모론 단체 큐어논 등 미국 사례를 훑는다. 공화당 지지 지역 주민들이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불신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정치를 접한다고 인터뷰하는 대목은 섬뜩하다.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으로 굴러가며 언론 신뢰도가 낮은 등 유사점이 많다. 승자 독식의 선거 구도에서 51 대 49의 싸움이 되어 버려 잘못을 저질러도 지지세력만 결집하면 된다는 팬덤정치가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성향에 맞는 뉴스를 소비하면 왜 안 되는 것일까? 확증편향이 강화되어 믿고 싶은 것만 찾아보며 나만의 세계에 갇히는 필터버블 현상에 빠진다. 그 결과 정치는 양극화되고 기본적인 사실조차 외면하면서 진영이 다른 사람과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 지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증오하고 인간 이하로 보는 비인간화가 일어난다. 거대 양당은 이를 해소하기는커녕 편 가르기와 혐오를 부추긴다. 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도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약진하였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출현이라 환호했던 20년 전의 감격이 무색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깨달은 일부 나라들은 디지털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및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부과해 해결을 시도 중이다. 미디어 공간이 공론의 기능을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인류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 기사는 알고리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소비중독을 일으키고 동시에 그것이 정치적 편향을 일으키면서 그게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지 썼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기사는 저희 보수진영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입니다. 그러나 고민은 동일합니다.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무제한 반대토론 하면서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을 축소시키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

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깨졌습니다. 여당의 강성 지지층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여당의 강성 지지층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야당에도 강성 지지자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 강성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현실을 설명하고 더 균형되게, 더 통합적이고 더 윈윈하는 정치를 꾸려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현실은 암담합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여든 야든 큰 득실이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슈퍼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수많은 검사가 파견되고 수사관이 파견됐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이미 압수수색을 다 당했습니다. 필요해서 조금 더 늘리고 확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과 어떤 등가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여야는 충분히 합의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특검법 개정은 여든 야든 아니면 국민이든 생각보다 득실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 발붙일 틈도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국민들은 흥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앙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알고리즘까지 더해졌으니 그 격앙과 흥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의원들 모두가 그 격앙된 감정의 골짜기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한다면 희망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알고리즘이란 현상은 이제 포착이 된 것이고 이제부터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알고리즘을 언제 어떻게 다 고치겠습니까? 이것마저도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여야 관계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발목 잡기라고 프레임을 들고 나오셔서 너무나 익숙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참담합니다. 열흘입니다. 13건에 열흘이고, 윤석열 정부는 3건에 넉 달이었습니다. 무엇이 발목 잡기이고, 무엇이 날치기입니까?

13건의 정부조직 개편이면, 그리고 부칙이 무려 600개가 넘게 바뀝니다. 600개가 넘는 법을 다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100개씩 봐도 일주일입니다. 하루에 100개씩 추가 토론하면 2주입니다. 토론 한 번 더 하면 3주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 다 사라졌고 그 근원에는 깨어진 여야 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깨진 배경에는 격앙되신 국민들과 알고리즘과 또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아직 한 발짝 못 떼고 있는 저희 국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정치의 양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관심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도 바빴고 당연히 국회의원을 뽑았고 대의제를 택하는데 잘하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제가 국회에 오게 됐고 또 제가 국회에서 활동한 1년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1년이었습니다.

저기 김성회 의원님 계신데 제가 한번 그때 진중권 교수께서 요즘 당원 교육은 당이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가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원저작자가 우리 김성회 의원님이시라고 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원 교육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직히 유튜버의 영향력이 저희 당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각지대와 이러한 놓침이 저희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합의해서 토론할 수 없는 지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는 있지만 또한 제가 뭐 얼마까지 고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좀 수구화됐는지 모르

지만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나라가 잘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의 고민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제가 다시 보여 드리겠지만 잘된 점도 있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재단하기에는 그렇지만 몇 가지 점들은 통치철학에 기반하고 시대적 수요에 맞춰서 신속히 하시겠다면 하실 만한 건이고 국민의힘이든 어떤 야당이든 그렇게 발목 잡을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지점 분명히 있고 저는 뭐 저희 지도부랑 상의한 게 아니라 저 개인의 양심으로 그렇게 판별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점은 헌법을 악용한 위인폐관이고 어떠한 지점은 선신구폐, 신조직을 만들고 구조직을 폐한다, 이사 갈 집을 정하고 옛집을 허문다, 이 상식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라는 멋진 말로 탄생하고 있지만 영국과 독일이 실패했던 기후에너지부는 이번에 고려가 된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만 쏙 빼서 환경부로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후에너지부라는 멋진 말을 붙이셨는데 탈원전에 한 번 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은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리에 앉으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탈원전을 호기롭게 했다가 원전을 복구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얘기니까 확신은 없는데 제가 그 당시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제 귀에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의 문제는 감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비용은 제조업의 미래를 결정하고 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산업의 미래와 제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 무역의 미래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로 따지면 아직 저희 80% 수입합니다. 식량자급률 아마 60%일 겁니다. 그 정도 수입합니다. 에너지는 99%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재생 늘리는 것 반대 안 합니다. 늘려야지요. 그러나 신재생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것은 국민께 상의해 가면서 순서를 밟아야 한다, 차분히 밟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신재생 정책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정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이 기억들 못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입니다. 에너지전환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당초에 착안했듯이 전환의 문제입니다. 원전과 신재생을 대비시키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고 석탄·석유·가스를 줄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무탄소 배출로 가는 것이 인류의 숙제이고 대한민국의 숙제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무탄소 배출로 가는 지름길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컬래버입니다. 그리고 그 컬래버가 가장 현실적인 수순으로 이루어질 때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원자력 복구하느라고 난리를 쳤던 그런 신파극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앞서가려다가 기후에너지부 만들어서 다시 에너지안보부를 만든 영국과 독일의 우를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부가 탄생한다고 해서 이런 모순에 즉각으로 빠질 것이냐? 저도 모릅니다.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론하고 정보를 받고 상의해야 되는 게 정부조직 개편인데 그것을 안 하시고 열흘 만에 통과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은 통과된 건지, 처리되신 건지, 짚으신 건지 에너지실만 쏙 빼 가시는데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탈원전의 실수가 거대하게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지 저는 걱정합니다.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미 로봇과 AI 시대가 다가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주제가 인구감소와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이민을 받아서 다문화 사회를 갖추는 것이 과거 선진국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문화적으로 태초부터 이민 국가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월적 지위에서 식민지 제국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 형성이 됐던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릅니다. 끝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금기적 사고가 많습니다. 저항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쉽게 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필요한 만큼 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AI라는 문명의 걸음은 대한민국에게 정말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화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초과학에서는 약했지만 현실 적용에서는 탁월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랬고 석유화학이 그랬고 철강, 자동차가 그랬습니다. AI와 로봇에서 저희가 못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어내려면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신재생, 태양광, 풍력 다 좋습니다. 경제성만 맞다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자력과 잘 컬래버해야 됩니다. EU 택소노미에서 원자력을 절대 박해하지 않는 이유를 저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이런 점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후에너지부를 예시로 들었고 경제부처도 과거의 족적까지 넣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행안위에서 얘기해 봐야 일곱 가지 지점 해서 몇 개 몇 개 그냥 얘기하고 스무 분 가까이 되지요, 저희 행안위원님들이 여야 다 합쳐서. 그냥 원 오브 20명 정도로 얘기하고 끝냈고 이런 거 다 제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꼭 제가 얘기하고 정리하지 않아도 분야별 전문가들이 저보다 더 깊게 상시적으로 실시간으로 고민하고 계신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지혜를 경청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결국 사회의 집단지성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단지성은 어떻게 귀결될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긁어서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 눈에 보여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 사회 지성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을 그 토론 결과에 따라서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들이 많이 흐트러져서 얘기할 차제가 안 된다. 저는 그런 분위기도 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정부조직법을 다룬다면, 그리고 저희가 기왕에 특검법 축소에 합의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시도했었다면 이런 점들은 충실히 토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열흘 사이에 달리기 때문에 제가 무제한토론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주신 국회의장단과 저희 당 지도부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또 소개할 만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두 건을 좀……

이게 오히려 좀 낫겠습니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겁박’ 진화, 민주당도 자제시키길”. 9월 17일 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것이다. 전날 사퇴론에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가 나중에 정정한 바 있다. 그래도 여론이 좋지 않자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파문을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볼 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실의 여론 감수성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이것은 정말 선 넘으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삼권분립은 최소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의 선을 밟는 순간 정말 위험한 선을 건드리게 됩니다. 다행히 대통령실이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가 적극적 진화에 나섰다,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파문을 진화했다, 천만다행으로 평가드려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날도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계속됐다. 원내부대표는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내겠다는 의원도 나왔다. 한 지역 전체와 법원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강력히 경고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 나왔다는 자체가 정말 걱정입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러면 정당이 뭐라고 헌법을 흔듭니까? 인간이 모여 살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기에 질서를 만들었고 그 질서의 정점이 헌법입니다. 정당도 대법원장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저희도 헌법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헌법 속에서 도전하고 헌법 속에서 자제하고 헌법 속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헌법 위에 어떤 주권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서열을 세운다든지 그런 세계관 자체를 대통령이 내비쳤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히 견제합니다. 누가 인풋시킨 것인지 내생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원내지도부는 대법원장 사퇴는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조차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했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4·19혁명 당시 내무부장관은 사형당했다고 협박으로 들릴 만한 발언도 했다.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뜻으로 들릴 언급을 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그 이후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자제시키는 것이 옳다’.

짧지만 상당히 냉정한 통찰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관찰입니다. 사법부가 흔들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흔들리면 민주당의 권위는 더더욱 흔들립니다. 정파적으로 저희에게 반사적 이익이 올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체계에 미치는, 헌정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큽니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 170석, 아니 190석에 가까운 거대 절대 의석을 지휘하고 있으

며 대통령 권력을 배출한 여당입니다. 자기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어느 부분에서 자제의 움직임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반갑고 이 움직임에 귀 기울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일반론적으로 한번 토론드릴 게 있는데요, 경제지가 소개한 최근의 경제 입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상법·노조법…… 보완 입법에 기업들 사활 달렸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국무위원들과 국가 성장전략 관련 토론회를 마무리한 직후였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성장전략을 논하면서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법안을 줄줄이 의결했다고 하니 기업들의 당혹감이 클 수밖에 없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1년 뒤,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법, 노란봉투법은 파업 조장법이라는 이유로 경제계가 강력히 반대해 온 법안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이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도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이 자칫 기업을 망가뜨려 국가 경제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에 경제계가 상법·노조법이 강력하게 통과되는 것에 강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또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법 개정안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새로운 머니 무브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밸류업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계엄·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타이밍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요.

1차 상법 개정안은 사실 저도 내부에서 강하게 요청드리고 해서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본시장은 크게 환영했고 주식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2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또 단독 통과시키셨습니다. 내용적인 문제보다 저는 속도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1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적응될 시간을 좀 두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법은 일반 특별법이 아니라 기본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사 관계, 기업 관계를 규정하는, 기업 구조를 결정하는 기본법입니다. 즉 기업들의 변화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계속 몰아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외부에서 한 명 정도 분리 선출한다, 이게 1차 상법 개정안인데 거기에 대응해서 또 지배구조를 보강해서 당초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면

또 그때 지켜보면서 2차 상법 개정안을 하면 됩니다.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감사를 분리 선출하는 걸 넘어서 이사 한 명 정도 자본시장이나 등등에서 집중투표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선진 자본시장의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가야 할 겁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외부에 열었다면 이사회를 외부에 여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줄 필요도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나를 열면 하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본시장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보해 가기 때문에, 특히 행동주의 관점에서 확보해 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1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 찬성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노조법까지 맞물려서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위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노조 노동자를 돕는 건지 노조 지도부의 협상력을 돕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더 센 상법 개정까지 이렇게 몰아붙이면 신문 사설까지 이렇게 안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5000의 시대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주환원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 구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주주환원율이 낮은 예가 없었지요. 그래서 늘려야 됩니다. 상법 개정안으로 늘리고 다양한 장치로 촉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물 기업들이 의욕을 잃어서 투자를 안 하고 기업을 안 한다면 그게 교각살우가 되는 겁니다. 교각살우의 징후는 우려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럽도 그랬고 많은 나라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것 신속히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 입법을 제시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수가 안 좋아서, 구조적으로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간단합니다.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소비가 줄고, 두 번째 수출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건설투자가 없는 것, 이 세 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인 내수 부진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원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유통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은 이 줄어든 파이에서 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소비쿠폰을 계속 뿌리면 소비가 살아나겠습니까? 특히나 그것을 선거철에 얘기하니 저희가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라서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지만 나라 빚을 내는 것은 생산적으로 써야지 소비적으로 쓸 일이 아닙니다. 소비적으로 쓰면 반드시 소비적인 결과로 귀결됩니다. 소모적으로 쓰면 반드시 소모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산적으로 사용해야만 생산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늘리는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부채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지적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대한민국 재정지출의 사업들은 튼실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육칠십 % 걷어서 지방에 60% 정도 보내고 있는데 지방의 인구 소멸이 축소됐다, 지방이 살 만해졌다 이런 얘기 덜 들립니다. 뭔가 분산되고 있는 거고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하던 대로 했던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어제 했던 대로 하면 어제 했던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기획예산처를 분리해도 기업들의 의욕을 살리지 않으면 세수는 늘어날 수 없고 주가지수 5000 시대도 다가올 수 없습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주주환원 배당률을 억지로 늘리는 효과는 나타납니다. 거기에 저금리가 겹쳤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오를 겁니다. 저도 환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짝이 아니라 이걸 지속가능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가지수 5000의 시대가 아니라 7000의 시대로 이어지고 주가지수 1만의 시대로 이어져야 우리 아이들까지 계속 자본소득을 쌓고 중산층이 되고 노후를 즐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소비쿠폰으로 써서 두 달 치 경기 부양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재정은 생산적으로 써야 합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빚을 덜 내자 그런 게 아닙니다. 빚을 낼 만큼 충분히 생산적인 곳을 찾아서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느냐? 취약계층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의 재정 여력을 갖췄다면 사회안전망은, 복지는 갖추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처럼 하면 안 됩니다. 프랑스 것, 외교적 결례인지 모르지만 이미 뉴스가 터질 대로 다 터졌기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도 헤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정도의 국가부채비율과 증가 속도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부채라는 것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자비용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증가율의 곡선을 윤석열 정부가 간신히 꺾었지만 이제 다시 높이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율을 꺾어서 잘한 게 아니라 그거를 꺾었지만 동시에 지출구조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출구조조정은 저희가 정부를 이어 갔으면 했을 텐데 이제는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국가부채를 늘린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부채를 늘리는 이유가 선명해야 됩니다.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귀결점은 항상 생산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소비적인 곳에 쓰면 소비적으로 됩니다. 취약계층에게 쓰면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전 국민에게 뿌리면 흩어집니다. 두 달에 그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재정의 얘기를 했지만 모든 세금이 도대체 어디서 걷히는 것입니까? 기업의 이익, 기업들이 창출하는 급여 그리고 기업들의 거래 그리고 기업에서 종사한 사람들의 급여에서 나오는 거래, 소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거두는 중심 세목이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이런 3대 중심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제법 큽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그것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걷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심 세목들이 탄탄히 커져야 하는데 이런 중심 세목들이 커지는 데 방해가 되는 세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속은 시원한데 내실은 없는 세금들, 즉 과도한 편중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와 상속세입니다.

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을 괜찮게 봅니다. 괜찮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부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보유세를 찾아간다, 그것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보유세로

가야 되고 또 보유세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양도세가 낮아져서 진입이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 원리를 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십 년간 못 했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자체 진화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 과표를 조정해서 종부세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살아나면 종부세 문제는 다시 터질 겁니다. 양도세는 원래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 정치인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지만 몇 표 안 됩니다. 표로는 몇 표가 안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선거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내에서도 제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하면 사실 그렇게 선뜻 동의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 진보 진영에서 설정하신 부자감세의 프레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서 돌파하려니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미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기업의 의욕이 꺾이고 거래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고 저희는 재정을 키워 나갈 수 없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말씀드릴 일은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만 그 전달하는 방식이 충실해야 되고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새 정부가 탄생하고 대통령 통치 철학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정부가 출범해서 바꿔야 한다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기본 원칙에 그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핵심 부처, 에너지 부처, 검찰 이런 핵심 기관들을 대폭 손질하면서 딱 열흘, 이것은 통치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적 파행입니다.

단순히 급하다는 것 이상으로 민주당에 견제심을 경고드리고 부활시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알고리즘 얘기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 얘기,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까지 다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좌초했습니다. 제가 반성과 사과로 무제한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지점이 있고 저희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저희의 역할을 찾아갑니다. 그 역할은 견제고, 민주당은 저희가 빠졌던 오류보다 더 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중심제인지 다수당 중심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당의 입김이 강력합니다.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 대통령 권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크게 실패하고 좌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저희에게 돌아올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저희가 해야 되는 도리는 정치적 견제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이렇게 열흘 만에 그리고 곱씹어 볼수록 많은 논점이 있는데 제대로 토론도 안 하고 생략해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일상에 바쁘시고 또 일상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일상 하루하루를 응원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강성 지지층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그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저희가 나서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저희가 맞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당원 교육을 유튜브에 맡기지 말

고 당원 교육은 저희가 좀 직접 하고, 민주당도 저희 국민의힘도 좀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보면 그 적용 대상을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 공기업이 31개고 준정부기관이 57개, 기타 공공기관이 24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이 기타 공공기관까지 이사를 확대하는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243개 신규 공공기관 이사 자리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조직과 연계된 쟁점인데 정부조직이 새 정부가 탄생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논의됩니다. 공공기관의 알박기 문제, 임기 문제 이런 문제인데요. 투명하게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뜻은 특정한 정당과 특정한 정파가 영구히 집권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정부를 심판해서 잘못한 점을 고치면서 더 잘하는 지점으로 모든 당이 움직여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년 단위 정부 변동은 제법 했습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는 이미 꽤 했습니다.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자리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극단의 정권 교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켜질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소개해 드린 바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청과 통합, 이재명 정부 3대 국정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국민을 배제한 독단적 정치,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권력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통합을 위한 정치를 실현한다'.

제발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통합의 정치가 구현이 되지 않는다면 갈등을 더 증폭하지 않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정치를 해야 저희가 국민께 도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 자리는 결국 또 자리싸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법을 바꾸고, 노동이사제 등등 해서 이사를 또 늘릴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 숫자가 부족해서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것은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투명하게 저희가 얘기하지 못하면서 열흘 만에 정부조직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도 오늘 패스트트랙을 탔습니다. 그나마 시간을 가지시겠다는 건지 또 일방 통과를 예고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귀 기울일 만한 말씀을 주신 칼럼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다수당이 사법부 장악하면 연성독재', 한 교수님이 제안하신 글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엄은 짧고 후유증은 길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가 이를 해제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2시간 38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6개월째 리더십 없이 표류하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계엄의 후유증은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만 해도 미증유의 정치적 분열을 겪었음은 물론 격변하는 대외 정세에 거의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했다. 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파산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일을 너무 자주 겪고 있다. 2004년 이래 국회의 탄핵소추만 세 번째, 체제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드러났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아마 계엄 이후 6개월 시점, 그러니까 한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쓰신 글 같습니다. 대부분 동의가 되고,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계엄·탄핵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적인…… 탄핵이 너무 쉽다, 탄핵소추 발의가 너무 쉽다 특히 그거지요. 그런 제도적인,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셨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현상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지적인데 정확히 공감됩니다.

계엄은 짧았고 그 후유증은 길고, 이 교수님이 6개월째 리더십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는 리더십은 있고 100일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표류는 멈춘 것인지,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은 끝난 것인지 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체제의 문제인지 또한 저희 정치 리더들이 헤매고 있는 탓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제의 안정성은 이미 깨졌다. 지난 5월 13일 만난 서울대 교수의 진단이 이러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이 교수님은 현 체제가 지속되면 실질적 민주주의가 크게 퇴조할 것을 우려했다. 헝가리나 폴란드처럼 선거만 잘 치러지는 연성독재가 눈앞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보며 충격받았다며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는 가운데 한국도 그렇게 갈까 걱정했다. 오는 6월 3일 6공화국은 다시 한번 대통령을 뽑는다. 교수님에게 전환기의 리더십을 물었다'.

특정 정파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에 모두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미국 등등등 정치적 양극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특정 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합법적인 독재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점을 대담 형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곧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먼저 짚는다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통합이다. 정치적 분열이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너무 격렬해졌다. 한국인은 지금 불안하다. 국내 정치 리더십이 없었던 상황 속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중국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나. 국민들 스스로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데 이번 대선이 그런 불안을 일단락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와 한국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얘기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뭉쳐야 되고 미중 갈등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하고 국제 환경이 격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 내부의 단합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상식의 논리를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이 조기 대선을 거쳐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인데 일단 이 교수님이 먼저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갈등 상황과 통합에 대해서 주변과 토론을 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하냐, 미국도 요즘 그런데. 미국의 정치 갈등은 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팩트입니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민 국가이고 다인종 국가이고 역사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내부적인 사회문제가 항상 제일 첨예했던 나라입니다. 경제는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때그때 고비를 넘어왔고 국방력은 전 세계 최고이고.

해서 제가 미국을 다 평할 수 없지만 미국을 요약해 보면, 저는 미국의 외교 노선이 흔들렸다는 얘기를 잘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시작한, 세계 전략을 시작한 120년 전, 1900년이 시작하던 그 시점 이후로 미국은 세계화 전략을 지속했고 세계화 전략을 자각했지만 액션에 좀 늦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지구촌의 경찰로 자기의 역할을 자각하고 지금 이 시간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국의 유럽 정책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변했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서 큰 폭의 스윙을 합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사회적 인종적 문제가 복잡해서 더 큰 정치 갈등이 터질 수 있는 나라지만 미국의 대외 전략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래에 외교 노선이 크게 달라진 것을 저는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 기본 전략 속에서 독일이 떠올랐을 때 독일을 견제하고 일본이 떠올랐을 때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이 떠올랐을 때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주당 대통령, 수많은 공화당 대통령이 있었지만 국제 노선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바뀝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공교육을 키우느냐 사교육을 키우느냐 이런 논쟁이 정치권에서 항상 많습니다. 당연히 공교육도 키우고 사교육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교육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최근입니다.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상이 발전하고 사회적 이슈가 교육에 침투하면서 문제가 됐지만 아주 긴 세월 교육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로 비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금번에 전교조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탄생하셨는데 전교조 출신이시면서 교사의 경험이 많고 교육감 경험도 많고 주변에서 하신 일이 굉장히 괜찮다 하는 게 민주당의 평가입니다. 저희는 전교조 출신이시고 북한을 열 차례 이상 갔다 오셨고 아이들이 그런 사상적 노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당은 오히려 이렇게 걱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분열의 요인은 저희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보여 주고 있는 외교 노선과 교육정책 같은 것의 일관성은 저희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조건은 어려운데 일관성은 더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스스로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백산 좌우로, 동시에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정치적 지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 속에서 대북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외교정책도 오락가락합니다. 한때는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를 들고 한때는 일본과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도 오락가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합니다. 그 조류에 꼭 연동되지 않는다 해도 저희 스스로 고쳐야 될 이유가 훨씬 더 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역할도 그런 맥락에서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폭넓게 사람을 쓴다는 걸 보여 줘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민련과 공동정부를 구성할 때 총리는 물론 경제·사회 분야는 전적으로 자민련에 인선을 맡기지 않았나. 그만큼 과감한 정도의 균형 또는 탕평 인사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좀 유능한 사람을 썼으면 한다. 대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능해야 하지 않겠나’.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조기 대선 직전에 나온 다음 대통령에 대한 기대입니다. 인사에서 폭넓게 쓰고 유능하게 쓰고 정파를 넘어서 쓰고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선을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드리면 신선한 기업인의 발탁 이런 것들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정파를 초월한 느낌, 노력은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연합내각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나 탕평 인사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썼으면 한다,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기존의 스펙만으로 유능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3500억 불 대미 협상이 지금 꼬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도 기업도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셨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거국내각에 준하는 정부 구성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교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거국내각까지는 어려워도 최대한 균형 있는, 안정감 있는 내각이 좋겠습니다. 균형이란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정감이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책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내각을 꾸려야 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인사에 너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국내각이라는 것은 여야 정파를 초월한 그런 내각인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균형 있게 안정감 있는, 아마추어적인 일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처럼 이념에 치우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실험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내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좋은 내각을 유능하고 실천적으로 실용적으로 잘 세우면서 내각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인사에 너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조금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 이런 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도 해 봤고 다른 일도 해 봤지만 리더는 만기친람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청나라의 건륭제가 만기친람으로 대단히 성공한 황제였다고 제가 역사학자한테 들었는데 만기친람 이후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사람에 의존했던 청나라는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건륭제인지 누구인지는 제가 좀 기억이 헛갈리는데 어쨌건 청나라가 팔기군에 입각해서 명나라를 물리치고 중원을 제패하고 나라를 잘 발전시켰는데 체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함정에 빠지고 산업혁명에 뒤처져서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식민지 비슷한 상태로 전락을 했고 붕괴했습니다.

비슷합니다. 대한민국도 제가 예전에 공직했을 때 경험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권한이 가장 강력합니다. 대통령실의 뜻에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간 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한이 집중되고 강력하면 책임도 같이 갑니다.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거기서 실수가 나와서 책임도 지고 등등 하는데 이것은 순순히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장관이 모험적으로 일하게 하고 거기서 조금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적 귀책을 책임져 주고 이러한 합작 체계가 있어야만 유능한 내각을 모셔도 그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장관이든 기재부장관이든 환경부장관이든 대한민국 장관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꼭 이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한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수님의 말씀이 시의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저희가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는데 대통령의 권위 그리고 대통령실의 권한은 계속 커져 왔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장관들의 위상과 권위는 줄어들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의 권한과 책임과 권력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초반에 올라갑니다. 중반이 되면서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정부 모두를 통할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각이 책임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체계 그것을 완벽히 구현은 못 해도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는 해야 됩니다. 이건 고민을 하는데 아직 이런 고민은 정부조직 개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직이 어느 순간 갈등의 아이콘이 되어 버렸다. 어느 시점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드리니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이다. 결정적으로 한국 사회가 양극화된 것은 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 관련이 있다. 내 경쟁 세력이 적폐라는 건데 정치적 경쟁은 다름의 문제이지 선악의 구도가 아니지 않나. 다음 대통령은 어느 쪽이든 그런 일은 벌이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니 더 이상 이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마 대통령선거가 결론 나기 전에 한 대담 같습니다.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7일 대담입니다. 저는 여기 교수님 말씀은 동의하지만 좀 부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양극화됐고 결정적으로 된 건 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 관련이 있다. 내 경쟁 세력이 적폐라는 건데 정치적 경쟁은 다름의 문제이지 선악의 구도가 아니지 않는가. 다음 대통령은 어느 쪽이든 그런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니 더 이상 이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 교수님의 정치적 성향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투표를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법절차를 하지 말고,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하지 말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보통의 피의자가 받는 절차로 인신 보호를 하면서, 인권 보호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공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과 봄을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 대담에 나오듯이 헌법을 지킴으로써, 헌법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그 속에서 국민도 보호되고 대통령도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그런 헌법적 통제 노력은 내란몰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때 극단화된 정치적 갈등은 지금 내란 청산 프레임 속에서 3대 특검으로 재현되

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넘어서는 시도를 지금 민주당이 이미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고.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 그걸 넘은 만큼 해결하셔야 될 지점이 더 커졌다고 저는 봅니다.

통합을 위해서 가야 될 길에 갈등과 상처가 크다면 통합의 담당자는 해야 할 책임이 더 커진 것입니다. 못 해내면 그 책임은 준엄한 민심의 평가로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이 어느 순간부터 갈등의 아이콘이 됐을까? 사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훨씬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릴 위치나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대통령직을 둘러싸고 저희는 진영 간의 첨예한 갈등에 빠져들었고 적대적 관계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습니다. 결국 수평적 정권교체를 하지만 평화적 정권교체는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 보복과 정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탓하시는 거는 얼마든 좋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비판과 지적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아야 될 비판이 민주당이 하셔야 될 책임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직이 갈등의 아이콘이 아니라 통합의 조율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 시점이 언제 될지는 차분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기적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답변입니다. '여럿이 있겠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을 한번 보자. 그와 김영삼·김대중은 그야말로 적이 아니었나. 군사정권의 핵심과 민주화운동의 거두들이었으니. 하지만 6·29 선언으로 타협하고 그다음 체제로 넘어오자 화해와 협력을 유지했다. 노 전 대통령이 참용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참고 용서하고 기다린다고. 정말로 그는 국회 개원식부터 갔다'.

지켜볼 때 선배 세대들이 해 온 정치에 비해서 저희가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기적 리더십, 언론도 얘기하고 이렇게 교수님까지 나서서 대담할 정도로 저희 사회에 깊숙이 잠복해 있는 뇌관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정도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여소야대가 된 1988년 13대 국회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맞다. 노태우 정부에서 일곱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민주화 이후 윤석열 정부 전까지는 제일 많았다. 그런데 일곱 번 중의 세 번은 거부권 행사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꼭 극단적 대립으로 가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노태우 정부 이전 5공화국은 정말이지 선악 구도로 정치를 하던 시절이 아니었나. 국면이 바뀌면서 노 전 대통령과 양 김이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 준 거다. 지금 묻고 싶다. 그때만큼 우리가 더 적대적일 수 있나'.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보여 주셨듯이 저희도 이제 전환기의 리더십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만큼 적대적으로 보인다'. 현재 그만큼 적대적으로 보인다는 질문입니다. '비판과 공격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틀에서는 정치 지도자들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나. 만약 다음 정부도 대통령도 되었고 입법부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라면 다시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것이다'.

아마 이 교수님은 정치 고관여층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을 예단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정부가 대통령도 되고 입법부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다시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안타깝게 저희는 이 예언을 실현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놓고 무제한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기사도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런 당위적인 얘기보다는 정부가 5년 내내 마음대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00만 표 넘는 격차로 대선을 이겼다. 직후에 치러진 총선도 범여권이 과반을 훌쩍 넘었다. 당시 민주당은 80석을 간신히 넘겼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겨 놓고도 광우병 촛불집회가 열렸다. 권력을 실제로 잡고 나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거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여당이 서울·경기도에서 지면 대통령 리더십이 약화될 것 아닌가. 실제로 권력을 갖게 되면 국민은 책임을 묻는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압도적으로 대선을 이기고 총선도 이겼던 시점에서 광우병 촛불집회에 발목이 잡혀서 대통령 권력이, 리더십이 흔들려 버렸던 당시를 묘사하셨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내년 지방선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야 모두 새겨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3자 구도가 된 이번 대선후보들에게 그런 대국적 정치의 가능성이 보이나', '세 후보들이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이겠다는 걸 명료히 했으면 한다. 다들 지치고 피곤하다. 대외적으로도 그렇지 않나. 대행도 대대행도 탄핵되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다. 국내적 지지를 골고루 받는 안정감을 가진 대통령이라야 밖에서도 신뢰를 받는다. 큰 틀에서 정치를 봤으면 한다.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리더가 이해하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YS는 문민정부라는 시대적 요구를 하나회 척결 등 행동으로 옮겼다. DJ는 외환위기를 풀어내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갈등과 분열을 푸는 게 시대적 과제다'.

큰 틀의 정치, 대단한 당위론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다.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정말 피로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 자체를 쳐다보는 게 피곤했었는데 제가 그 한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정말 바뀌지는 않고 더 계속 실타래처럼 꼬여 가는데 정말 안타까울 뿐인데 잘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대적 큰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정치 리더십이다. YS는 문민정부라는 시대적 요구하에서 하나회 척결을 했다. DJ는 외환위기를 풀어내려고 노력했다. 지금 시대는 갈등과 분열을 풀어내는 게 시대적 과제다.

저희는 현재 전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법, 정부조직법 동시 합의처리에 근접했다가 뜨거운 물을 끼얹어 맞은 사람들처럼 화들짝 놀라서 다 파기되고 이런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란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질문입니다. 요즘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적폐청산이 시대청산이 아니라 요즘은 내란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아예 공언하고 계시지요. 대선 전인데 그 당시 이 교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권력을 잡은 쪽은 또 보복할 것이다.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짧게 답변 주셨네요.

내란청산이든 무슨 프레임이 됐든 진실 밝히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술 부

위를 작게 하는 게 명의다' 이 말씀은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생살까지 많이 잘라서 상처가 커지면 그 상처는 누가 치유하고 누가 통합합니까?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다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정치를 선동할 것이냐, 그것을 치유해서 정치를 회복할 것이냐, 이게 정치 리더들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탄핵 정국에서 유독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졌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이 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에 불복해 미국 의회의사당 난입했던 사건처럼. 결국 내 뜻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하든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부지법 폭동도, 헌재 판결을 앞둔 보수단체의 집회도, 민주당의 대법원 공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법부는 그냥 사건이 있으면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타이밍이 선거를 앞두고 예민하다고 해도 사법부를 압박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식의 불만 제기는 위험합니다'. 여야 모두 할 말이 없는 답변이십니다.

서부지법 폭동,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절대 안 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을 앞두고 보수단체의 집회가 헌재 앞에서 있었고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이 대법원을 공격했습니다.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전에도 있었고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일, 공수처 권한 없는데 수사한 일 등등 시점 시점마다 우리는 충돌하고 부딪쳤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사법부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냥 두십시오. '사법부는 그냥 사건이 있으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가 집회를 했든 민주당이 압박을 했든 헌재는 8 대 0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원도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결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체제가 만들어 낸 구조이고 그 결과에 순응하면서 고쳐 나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의 소임입니다.

특정 재판, 내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일은 진보도 보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조차도 결국은 정치적 극단의 대결과 강성 지지층의 문제가 얽혀 있고 그 연장선에서 저희는 특검법을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조직법을 놓고 무한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안정성 차원에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다. 헝가리는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확 낮췄다. 그러면 법관들 퇴직이 늘 것 아닙니까? 그 빈자리에 내 편을 집어넣었습니다. 폴란드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대법원 판사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헝가리, 폴란드가 했던 일입니다. 이러면 삼권분립이 깨집니다'.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5월 달에 벌써 경고되었던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계시고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협박하고 계십니다. 헝가리, 폴란드가 했던 수준 정도로 우리가 가고 있다니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법부를 건드리면 연성독재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뜻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러면 체제 자체가 권위적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도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전례도 없고 외국도 그러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나 하는 것이지 판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법부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예전에 왕이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나랏일도 집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나라의 재정권과 법률권을 의회가 가져온 것이 민주주의 혁명이고 그때 탄생한 것이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이 삼권분립의 기제가 21세기에 들어서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그것도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인데 그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독립적으로 해라, 그러려고 만든 게 사법부인데 독립적으로 안 하면 사법부를 만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정부 여당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추천권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이런 질문, 이게 좀 헛갈리는 질문인데 하여튼 읽어 보겠습니다. ‘사법부가 기왕 정치적 관심을 받았다면 중립성을 높여 주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임명하는 식이다. 여당 몫, 야당 몫 같은 건 없애버리고, 아예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려면 무난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닌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도 없애고 법원 내부에서 추천하는 등의 형태로 가야 한다’.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인데 굉장히 원론적으로 맞고 귀에 쏙 들어옵니다.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추천권 이런 것들 다 중요치 않고, 대통령 지명권 이런 것 중요하지 않고 국회 3분의 2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3분의 2면 20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턱이 높아져서 실력 있고 무난한 사람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인데 이게 무난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건가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그렇게 될지 해 봐야 되는데, 뭔가 제도개선을 한다면 지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것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어떤 방식이든 하는 것은 좋다,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여야를 떠나서 그냥 중립적으로 강화하는 대신에 대법원장을 괴롭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든지 청문회로 부른다든지 이런 식의 언사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야당으로서는 견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소명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가 됐다 퇴행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갈 수 있어 걱정이 된다. 그런 나라들이 선거는 제대로

치릅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형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까지 장악해 놓고 만든 법이 이상해도 사법부가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살아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걱정이 상당히 저희 나라에 전달이 되는데, 선거는 치르는데 그런 제도적인 선거의 결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는 행정부 마음대로 하고 입법부까지 장악해 놓고 만든 법이 이상한데 사법부가 견제를 못 한다? 이러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치르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의 퇴행입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사법부는 그냥 독립인 것입니다. '대통령제는 의회와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와의 분립이 좀 크고 내각은 입법과 행정이 조금 더 융합된 모델이지만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사법부만은 분리돼 있다'.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 지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년간 탄핵을 세 번 겪었다. 대통령의 리스크인가, 대통령제의 리스크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제의 리스크입니다. 대통령제는 내각제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 정치는 항상 좋기만 했겠습니까만. 그런데 우리는 20년간 세 번의 탄핵소추를 겪고 두 명은 실제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제의 안정성이 깨진 게 아닌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탄핵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한번 확 바꿔 가지고 탄핵시키면 되겠네 하는 것입니다'.

근자에 벌어진 바로 그 전개인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꼭,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제도가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노예가 된다면 저는 이 논리는 수긍할 수 있는데, 제도 때문에 꼭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 수는 없고 제도가 이런 위험성을 쉽게 노출할 수 있다 이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는 왜 그 맹점을 쉽게 활용하는가, 그 유혹에 쉽게 빠지는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것은 상황의 논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시도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정치의 양극화라고 생각하고 그 정치 양극화의 원인 중의 하나, 제가 국회에서 겪은바 편중된 정치적 의사전달과 그것을 강화시키는 SNS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강화되는 정치적 메시지, 이런 무한반복을 저는 관찰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증폭되고 편중되는 상황 속에서, 보고 싶은 뉴스만 보고 듣고 싶은 뉴스만 듣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지층이 굳어지고 그 지지층에 계속 서비스하는 정당들이 존

재하면 손쉬운 탄핵제도는 국가를 계속 흔들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인식 때문에 대통령제를 그만해야 한다는 것인가?’.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거기에 기반하는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탄핵 국민행동 같은 게 생겼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비슷한 일이 생겨날 것 같다. 만약 이번 대통령도 삼사 년 하다가 물러난다면 이 시스템은 끝난 것이다. 왜 이런 제도를 유지하나. 실패의 비용은 국민이 다 지고 있지 않나. 대통령의 권위도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다. 큰 정치인의 카리스마나 권위,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 그런 것이 이제 없다. 대통령이 쉬워진 거다. 분단국가에서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의 정점에 있고 단임제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나라의 몸뚱이가 커졌는데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이 교수님은 제 관찰로는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단임제 5년 간의 안정성보다는 5년마다 바뀌는 불안정성 그리고 그 5년마저도 탄핵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상태로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총리 중심 내각이 실질적 정책을 집행한다. 대통령은 정무적으로 총리와 내각을 견제하고 필요하다면 인구나 기후위기 같은 장기적인 과제를 책임진다. 야당 총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재미있는 게 요즘 장관들 일할 만하다고 한다, 용산에서 전화가 안 오니까. 그러고 보면 장관들에게 제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는 개별 부서의 자율성이 많이 사라졌었다. 국정철학에 맞는 장관이라면 좀 맡겨야 한다’.

다음 질문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연동되니까.

‘프랑스식 이원집정제에 가까운 형태입니까?’, ‘그냥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부 안에서 권력을 나눠야 하는데 사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야 내각제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싶어 합니다. 위기 상황에는 대통령이 통수권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 점이고 중간 단계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형태로 가면서 중앙과 지방 권한을 정확히 배분해야 합니다. 부통령제는 어렵습니다. 권력에 누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게 낫습니다’.

현재의 극단적 갈등 상황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 집중되면서 내각, 장관들의 역할이 축소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고치는 점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선호하시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분권형으로 가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고 내각을 활성화시키고 그 내각의 총리는 국회가 뽑고 이런 타협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작동 가능한지, 성공할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 보고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점은 있습니다. 현재처럼 저희가 대통령을 뽑아 놓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다 밀어주고 초기에 지지율이 높았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선거를 하고 의석수가 바뀌었을 때 탄핵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균형적인 관점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점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1번 국정과제를 헌법 개정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대략 자료는 보았는데 조금 더 디테일을 파악하기 전에는 그건 코멘트하는 게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러한 관점들이 다양히 투영됐으면 합니다.

헌법을 바꾼다는 것, 나를 위해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바꿔야 하고 그 결과 내가 반사적 이익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바꾸는 헌법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은 헌재가 하는 것이 맞나, 미국처럼 의회가 하는 것이 맞나'. 답변입니다. '미국 상원의 기능을 헌재가 하는 셈인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헌재도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가. 결국 문제는 그 구성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탄핵도 탄핵이지만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문제를 헌재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과도하다. 타협을 통한 정치의 범위가 더 큰데 정치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총선에서 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다 지지 않는가'.

저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지점들인데 상당히 날카롭고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을 미국은 상원이 심의하는데 우리나라 헌재도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성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거고 또 더 근원적인 문제는 제가 아까 정치의 사법화를 걱정하면서 과거 문무일 총장님의 비유를 소개해 드렸듯이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스스로 타협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헌재로 가져가고 사법부로 가져가고 검찰로 가져간다는 것이 문제다. 제가 좀 확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치의 사법화가 과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부터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개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키우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도 참 기억이 나네요.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사법적으로 한번 판단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막상 총선에서 지면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고민할 지점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여당 장악은 제왕적 대통령의 대표적 단면 아니었나'.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3김 시대의 역작용으로 만든 게 당정 분리인데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개입으로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법 이전에 정치의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이고 정치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한다고 공개성명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동의했던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등 정치 파행의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급했고, 언급했다면 헌법재판소가 봤다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저항하

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개입으로 유죄가 나왔다. 이 지점이 정치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법으로 가져갔다, 교수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쳐 가야 될 문제인데 아직도 저희는 이런 꼬투리를 잡으면 사법부에 가져가려는 그런 팽배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치가 복원되는 길은 저희 스스로 정치적 토론을 하고 사법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대담을 읽으면서 그런 결론에 더욱 뚜렷하게 귀결됩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2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되니 대통령의 정통성이 강화됩니다. 인위적 단일화 등 정치공학적 접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될 것입니다. 개헌할 일은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선거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용 문제는 핑계입니다'.

여야 모두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면 당연히 대통령의 정통성이 강화되겠지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단일화한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둘이 올라가서 파이널라운드를 하니까 50% 이상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아무래도 중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결선투표 전까지 다수의 후보가 경쟁하면서 다당제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상당히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 정치권이 신경 써야 될 대목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게 국민 여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늘려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까닭은 경쟁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적인 정책과 임무를 내세울 수 있는 집단이 등장해야 기존 정당들이 긴장을 합니다. 중앙에서는 과점, 각 지역으로 내려가면 독점,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독과점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비례의석을 50명가량 늘려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다당적 구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정당이 과반을 얻기 어렵고 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많은 정치가 바뀔 것입니다. 결국 지역구 의원을 줄이거나 비례의원 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보다 나라를 하나 세우는 게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결국 이 교수님의 지적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그런 인기영합적인 처방보다는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이 극단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비례 국회의원을 좀 늘려서 다당제가 출현하고 과반 정당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는 동의가 됩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잘될 것 같으면 저는 특정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과반, 독과점의 문제가 맞습니다. 특히 외곽에서 관찰하셨기 때문에 관찰이 아주 예리하십니다. 다만 이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극단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가 연성독재로 흐를 수 있다, 대한

민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대선 이전에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대선 이후에 우리는 정확히 이 길을 걸어오고 있고, 슈퍼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청산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고 그 속에서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지금 이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은 토론도 없이 열흘 만에 통과되고 있습니다. 통과를 시도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정리한 낙제·퇴장·채점거부 그 슬라이드 좀 다시 띄워 주십시오.

제가 계속 간간이 이 슬라이드를 소개드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특별히 저희 당의 어떤 의견을 모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제 양심을 걸고 판단한 겁니다.

잘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합격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통계가 데이터이나 데이터가 통계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저거는 통치 철학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저것도 지식재산을 강화하고 특허를 좁은 범위에서 업무를 확장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 부총리 격상 잘하셨습니다. 저거는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이공계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미래 비전이기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산업부차관이 생긴다는데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만 좀 드립니다. 처벌 위주의 산업안전 제도는 이미 강력하고 더 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 위주의, 치유 위주의 산업안전보건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 조화를 이루어야지 제대로 일을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더 센 중대재해처벌법, 더 더 센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고 처벌만 확산되고 있고 치유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차관이 탄생한다, 동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구조에서 계속 취약한 내수에서 경쟁하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가장 힘드신 분들로 저희 정치인들이 가장 크게 응원드려야 할 분들입니다. 제발 전담 차관이 생겨서 문제를 더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합격점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박하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론하면 됩니다. 토론 기회를 계속 주시면 되고 평가해서 귀결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지금 통과시키시는 것이고요. 상임위 토론도 없었지요.

경제부처는 제가 한 두어 시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작아서 문제였는데 더 작게 탄생시키고, 재정경제부는 예산 기능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다시 예산 기능 없이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다시 금융정책이 없는 식으로 탄생시키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낙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탄생, 이거는 거대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후폭풍이 아주 클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에너지부의 탄생, 그리고 민생 수사가 1년간 공백에 있고 무한 핑퐁의 문제가 다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무한 핑퐁, 사건 기간 늘어나는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 주시지요.

검경수사권 조정 저때가 문재인 정부 말기, 윤석열 정부 출발하는 딱 그 시점 그때였는데 어차피 검찰 전체 사건 평균처리 기간이 좀 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확 늡니다. 아까 구체적인 내막은 따져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따져 보시자고요. 따져 보려면 토론 시간을 주고 분석 시간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문제는 미래 전망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의 간판을 떼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탄생한다 하면 1만 1000명의 수사관과 2300명의 수사관, 그들은 일손을 놓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강화되니까 경찰이 열심히 하겠지요. 더 하겠지요.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저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드는 조직개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은 낙제점이라고 할까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1년간의 시행기간 동안에 잘 만들겠다. 제가 그래서 채점을 거부하는 겁니다. 답안도 없이 채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선신구폐, 살 집을 짓고 옛집을 허물어야 된다 이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거기 마지막 하나 퇴장이 있지요?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조직을 폐관하고, 위인폐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답변과 정황. 위인폐관, 이것은 아예 퇴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발전시키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눈감거나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낙제가 4건이고 퇴장이 1건이고 채점 거부 3건, 합격 5건 총 13건입니다. 한 달간 더 토론하면 퇴장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낙제가 줄 수도 있고 채점 거부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저출산,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 이런 것 그리고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의욕이 없는데 일을 하겠습니까? 공직자는 기계입니까, 로봇입니까? 기계나 로봇도 동력이 들어가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자 사기 진작 없이 어떻게 공직자들에게 결과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논점들 없이 진행되는 조직개편, 결국 급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후, 두 달 후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고 대통령이 바뀌지도 않을 것인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지.

그러니 저희는 결국 추석 전에 검찰청 간판을 떼겠다라고 호언했던 정치인의 말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석에 검찰청 간판을 떼겠다는 그 약속도, 그 약속을 기대하시는 국민들도 품질 좋게 하라는 뜻이지 '일단 떼고 보라. 혼란을 증폭시켜도 상관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까지 기대하실지 자신이 없습니다. 해서 정부조직 개편은 밀어붙이실 일은 아니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실 일은 아니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얘기하지만 이 정부조직 바꾸면 운전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추석에 잠깐 기분 좋자고 몰아붙이시는 거라면 정부 내내 불편함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숙고하시기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제안드립니다.

제가 검경수사 핑퐁에 대한 기사 하나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경이 핑퐁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앞으로 1박 2일 더 소개할 만큼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사를 아예 가져왔습니다.

‘검경 핑퐁수사 심화에 재판 지연 우려까지…… 느슨해지는 법망(심층기획-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저 이 기자님하고 연락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핑퐁수사라는 말 그대로 쓰셨지요? 제가 여기에서 따온 것도 아니에요. 저 스스로 생각해 본 얘기인데 이게 그대로 맞았습니다.

‘국민이 경험할 새 형사·사법체계. 문 정부 수사권 조정에 기관 책임이 모호하다. 여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서 수사 6개월 초과한 사건이 두 배 늘고 있다. 중요범죄 사건 처리 더 늦어질 우려가 있다. 불완전 수사 뒤 기소하면 법원 부담이 늘어난다. 재판 늦어지면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요지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권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검찰개혁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15일 법조계에선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은 자칫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구조로 정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문제가 심화해 애꿎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가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수사도 없이 기계적으로 기소로 이어질 경우 현재 2~3%에 불과한 형사사건 무죄율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커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요약한 듯한 기사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솔직히 고백드리는데 제가 이 필버 시작 전에 이 기사를 읽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취지의 기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찾아 달라고 그냥 저희 보좌진께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읽어 보고서 채점 거부 이것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 읽겠습니다. 특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2022년 5월 10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즉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음주 측정 당시 경찰이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문제를 주장했다.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는 6월 8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게 요약하면 2022년에 음주운전이 있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이었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피의자가 경찰이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고 절차적 문제를 주장해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검사가 6월 8일, 그러니까 얼마예요, 5월 10일에 음주운전을 하고 6월 8일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니까 한 달 정도 후네요. 그러면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이런 말이지요.

그다음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한 것은 9개월이 지나 2023년 3월 15일이었다’.

5월에 음주운전이 있었고 6월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얘기했는데 그 보완수사 결과를 9개월이 지난 후에 경찰이 검찰에게 보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담당 검사는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은 돌연 2024년 2월 송치 결정을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해서 사건을 종결했다’.

여기 전개가 좀 빨라집니다. 2022년 5월에 음주운전을 하고 한 달 후 6월에 보완수사를 검찰이 요구해서 돌려보냈고 경찰이 그 보완수사 요청을 받고 9개월이 지나서 3월에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냈는데 검찰이 재차 보완수사 요구를 한 거지요. 그런데 경찰이 돌연 2024년 2월이니까 보완수사 요청을 2차, 두 번째 받은 후로부터 거의 한 1년, 한 11개월 지난 다음에 송치가 아니라 그냥 불송치, ‘이건 불송치하면 돼’ 그러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또 있습니다.

‘검사는 2024년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해서 사건을 넘겨받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이었다. A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긴 전개인데 하여튼 2년 걸려서 음주운전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주거니 받거니 핑퐁하다가 경찰은 종결했는데 검찰은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언론이시니까 이 기사에 맞는 사례를 물론 채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맞을 것 같고 이 사실이 맞다면 제가 얘기했듯이 핑퐁게임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행안위에서 이것 하나밖에 안 물어봤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1년 동안 잘 만드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는데, 제가 기사를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그러자 경찰은 수사가 미비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을 돌려보내는 핑퐁 현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핑퐁 현상은 이미 기사화로 되고 사례까지 채집될 정도로 벌써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금번에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를 같이 고쳐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런 것 없이 왔기 때문에 이 기자도, 언론께서도 정확히 저와 똑같은 지점, 딴 얘기 안 하고 딴것 반대하고가 아니라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거지요.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자기 사건이 아니라며 수사기관 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개혁안이 실현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 설립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을 이렇게 대충 만들면 모든 사건을 서로 미루는 핑퐁게임이 시작될 것이며 사건 초반에 증거를 빠르게 취해야 하는데 수사기관끼리 싸우는 와중에 증거가 다 인멸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저희가 이런 거대한 제도를 손대면서 100% 완벽하게 미래를 규정할 수도 없고 디자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거진 문제, 그래서 더욱 불거질 것이 선명한 문제이 정도는 토론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 해야 되고 기소·수사권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요. 그거 하자고요.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최소한 이 핑퐁의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수사지휘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지휘권이 상하관계의 느낌 때문에 경찰에게 어떤 명예적인 손상을 준다면 그 명칭을 보완수사 요청권, 조율권, 뭐든 만들어 가는 정도는 저희 입법가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뭘 뺏는 것에 주력하는 것 좋은데 경찰에 몰아준 수사권도 정확히 작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경찰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 경찰 되게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10시간 가까이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벌어진 문제, 시중에 파다한 문제만은 고치는 정도의 정성은 국회의원들이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경제 범죄 등 검찰이 수사 전문성을 가진 중요사건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6개월을 초과한 사건 비율이 사기범죄는 2020년 11.8%에서 24.8%로, 횡령은 8.8%에서 14.9%로, 배임은 20.5%에서 50.2%로 늘었다'…… 이렇게 곽규택 의원이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찰로부터 제출돼서 받은 자료지요, 곽규택 의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시고. 이거에 따르면 6개월이 넘어간 사건의 비율이 사기, 횡령, 배임 이거는 다 민생범죄인데 다 두 배 가까이 혹은 두 배 넘게까지 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에 이 6개월의 의미가 왜 중요한지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죄가 남기는 그 후과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 정말…… 또 사기범들이 머리가 좋아 가지고 얼마나 고도화됩니까. 이런 범죄 6개월 이상 지연이 늘어나고 있고. 횡령은 공금 빼는 거 아닙니까, 회삿돈이나 그런 거 등등. 그러면 사회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늘어나고 있고.

요즘 배임죄 없앤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데 상법상의 배임죄를 완화시키고 그런 거는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법상의 배임죄라는 것은, 그거는 일반 기본법입니다. 이것은 배임죄가 없어서 배임이 횡행하면 어떤 회사를 믿고, 어떤 이사진에게 믿고 임무를 맡기겠습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저희가 공기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신뢰 자본이고 법을 지킨다, 신의를 지킨다, 신용을 지킨다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출발점 아닙니까. 신용 사회, 저희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런 지점이 형성이 안 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용을 붕괴시키는 걸 잡는 게 배임죄, 사기죄, 횡령죄 아닙니까. 이게 6개월 이상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인데……

다음 읽어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면 기소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검사들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러면 법원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왔

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면 공판 자체가 최초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건 발생 후 6개월 있다가 재판하는 것과 사건 발생 후 2년 뒤 재판하는 건 증인의 기억이나 진술 등에 질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무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까 6개월 이상 수사…… 아니지요. 사기·횡령·배임죄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그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거 너무 단순한, 상식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6개월 이내의 저희 머릿속의 기억하고 2년 후 기억, 1년 후 기억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살아 있을 때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연되면 당연히 미궁에 빠질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 이건 산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 분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분리 이후에 수사지휘권이든 보완수사요청권이든 이런 것을 질서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늘어지고 있는 수사가 더 늘어진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론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그다음, 저는 이 부분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수사 주체와 재판에 서는 검사 간 소통이 단절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판부에서 근무한 한 검사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제 사건은 재판 전 증거 기록을 모두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누구를 추가로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할지, 증거에 어떤 부분이 어떤 증언과 결합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직접 증거 수집을 하거나 대면 조사를 해 본 사람밖에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이후 형사재판 기간이 과거보다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이에 더해 미국처럼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에 세워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모습도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은 검사 경험이 있으신 분이 말씀하신 건데 직접 신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건기록만으로는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로 이해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사건기록만 보는 것하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하고 그게 차원이 같겠습니까?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드리지 않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 이런 불편은 생겨날 것이고 이것은 경찰이 극복하고 검찰이 극복하고 서로 일하는 방식을 발전시켜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100% 동의 안 드리는 건데, 그런데 같이 일하는 방식이 뭔데? 없는 겁니다, 지금. 분리만 시키고 없는 겁니다. 수사지휘권을 주든지 보완수사 요청권을 주든지, 업무체계를 짜 주지 않고 분리만 해 놓으면 그냥 분리되는 겁니다.

아니, 검사가 직접 수사할 때 훨씬 잘 지휘할 수 있겠지요. 사건기록만 보고 실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고 어떤 증인을 불러야 할지, 어떤 증거에 어떤 증언을 결합했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대면 조사를, 수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면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능력이 늘어날 겁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을 높여야 하고 그 부분에 국가가 역점을 또 쏟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역량이 늘어난다 쳐도 검찰·경찰 간의 수평적으로 핑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업무 프로토콜, 매뉴얼 체계를 강제적으로 짜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라, 행정기본법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 며칠 내 처리해라 그런 것은 왜 기한을 설정합니까? 늘어지니까 하는 겁니다, 늘어지니까.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지요. 그러나 제도는 선의에 기반해서 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인의 행동을 기준으로 짜는 것 아닙니까. 사건은 쌓이고 수사는 지연되고,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의 역량이 높아져도 선택적 수사를 할 겁니다. 어떤 사건은 촉진되고 어떤 사건은 누락되고 어떤 사건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제 체계를 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뭐 사법 전문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은 제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법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조직 설계의 기본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 청-청 간의 문제 갈등, 핑퐁 문제 이건 대한민국에서 항상 터지는 문제입니다. 모여서 처리하면 1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교육청, 경찰청, 구청 여기를 전전하면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원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중수청, 경찰청, 공소청을 만들면 이들은 필요할 때 딱딱딱 초기부터 컬래버하고 소통하고 협업해서 수사 지연이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누락도 없이 왜곡도 없이 갈 것이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제도를 짭니까? 그것은 제도를 안 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제도를 짜 보고 기관 설계도 해 보고 했지만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것은 후과를 남기는 일이고, 더 놀라운 일은 저는 500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후과는 박수민의 시뮬레이션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계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전의 통계가. 이 문제를 눈감는 것은, 열흘 만에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니고 무제한토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읍 의원 의석에서 — 박수민 의원님!)

예?

(○김도읍 의원 의석에서 — 장관이 1시간 전에 나가고 없거든요. 의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 위반사항 아닙니까?)

(「장관 어디 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관 사퇴했나요?」 하는 의원 있음)

(「장관 오라 그래,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장관은 양 교섭단체의 양해를 다 얻어서 차관으로 지금 대리출석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물어보세요, 그쪽 교섭단체가 합의해 줬으니까. 이 밤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좀 상의하고 물어보시고 소통 좀 하시라고요.

진행하세요.

○박수민 의원 저도 윤호중 장관님 계속 뵙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차관님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 김민재 (국무위원석에서)

예.

○박수민 의원 1차관님?

알겠습니다. 이것 정부조직법 담당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 김민재 (국무위원석에서)

예.

○박수민 의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행안위에서 넌지시 여쭤봤는데 윤호중 장관님하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이 뭔가 지금 숙의는 많이 하고 계세요, 숙의는. 그런데 그 숙의 결과를 좀 저희한테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누가 반대합니까? 저는 이 검사가 얘기하신 것 공개적으로 다 찬성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건기록만 보고 수사 지휘하려면 되겠습니까? 힘들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용인하겠습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직접수사를 없애는 게 대전제라면 이런 불편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 극복의 방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초기부터 협업을 촉진하고, 아이고…… 그리고 1년을 달라 하시니 당연히 1년을 드려야 되겠지요. 뭐 어쩔 방법이 있겠습니까, 밀어붙이시는데.

그런데 다시, 제가 계속 멋진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선신구폐, 살 집을 짓기 전에 기존의 집을 허물지 마라. 갑자기 비 오고 혼란스러우면 어디 가서 대피를 하겠습니까? 1만 1000명의 수사관과 2300명의 검사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상식적인 기준으로 어디로 갈지, 변호사 나갈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보통의 심리지 '1년 후에 폐지될 때까지는 성심을 다해서 직분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조직이 흔들리는 겁니다, 1년 동안.

마지막 대목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이것도 재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이후 형사재판 기간이 과거보다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이에 더해 미국처럼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에 세워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는 모습도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거지요.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그다음에 수사경찰하고 피고인을 같이 불러서 검사들이 신문해서 죄를 입증하려는 모습도 벌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취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 중심 체계, 그러니까 공판중심주의를 발전시키는 역사적 진전의 과정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펼쳐지겠지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잘 다뤄진다면 저는 이런 것도 꼭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겪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의 사법화 문제, 사법의 정치화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고쳐서 분리하면 이런 문제가 벌어져도 되는데 이런 공판정에 수사경찰과 피고인을 같이 불러서 공판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기까지 6개월 내에 진행이 돼야 될 것 아

닙니까.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피해자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 인멸이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그런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일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수사 지연과 핑퐁의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제가 토론드리는 것입니다.

끝에 요즘 날카로운 의견을 주셨던 차진아 교수님의 의견도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검사는 수사 쟁점에 대하여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 수십 명을 써서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면 그제야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검사가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은 결국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차진아 교수님에 비해서는 학식을 다툴 수 없을 정도로 차 교수님이 월등하시지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저는 상식의 관점, 조직 설계의 관점에서 봐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까지 인정되지 않으면,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검사는 수사 쟁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토론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쟁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수는 없고, 좀 강조하신 것 같고 한두 개 알겠지요. 그런데 전체 그림이나 예리하게 파고들기에 한계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 수십 명 써서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면’, 즉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전관 변호사를 써서 수사 검사가 서류만 보고 하면서 허둥대고 전체나 예리한 지점을 파악 못 했는데 전관 변호사가 그 허점 허점과 사각지대들을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파고들면 검사가 무슨 대응이 되겠냐.

즉 이 부분에서 요즘 검사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미지 속에 있는 검사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새롭게 출근하시는 30대 검사들도 많으십니다. 그분들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 진짜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힘센 전관 변호사들이 움직이면 이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 도망갈 것 같아서 수사·기소 분리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 직접수사권도 없앨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하겠지요. 경찰이 능력을 발전시켜서 이런 힘센 피의자들도, 전관을 많이 채용한 변호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수사를 파고들겠지요. 그리고 이런 중요사건이면 수사기관 간의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이것은 저희가 몇 개의 중요범죄는 놓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다. 저는 경찰이 할 수 있다고 믿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역량을 확보하기까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을 줄일 수 없다면 포기해야겠지요. 그런데 줄일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겠지요.

제가 그래서 새집을 짓기 전에 옛집을 허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집을 잘 지어 놓고, 기능 설계와 경찰·중수청·공소청 간의 협업체계를 잘 설계해 놓고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

해도 민주당 의석은 여전히 170여 석일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실 건데 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여야 합의가 파기되고 일주일 만에 또 밀어붙이시느냐.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제가 이해한 정보는…… 제발 정보가 있으면 좀 더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조금 더 객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십시오. 저는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선물해 드리겠다는 정치적 선언 말고는 유추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청 폐지를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폐지하라는 거지 문제를 왕창 일으키면서 검찰청을 폐지하라고 민주당에게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빚에 갇혀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토론할 점을 토론하지 못하고 그저 짤막한 정치적 말빚에 갇혀서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제한토론을 100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쉽게 저희 제도가 24시간 후에 무제한토론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대미 협상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 개편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세출의 분리를 하고 기재부를 약화시킨다 여기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 약간 집중하신다, 꽂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해결해야 되는 1번 목표가 세입세출의 분리인지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리하면 대미 협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지, 지금 25%로 올라간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는 것인지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이 없지요.

지금 조금 힘드신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스토리텔링 형태로 하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제가 하나 정리해 봤는데 아마 대부분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자본주의를 통해서 나라들이 하나씩—소수의 나라지만—산업화에 성공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번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은 이태리 상업혁명, 15세기 정도 되지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태리 베네치아 이런 데서 동서양 무역, 향료·비단·도자기 이런 게 번성하면서…… 그런데 그때 육로로 왔지요. 그때 육지길로 와서 상업이 번성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시대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이태리 상업혁명이 터지고 그때 르네상스가 펼쳐지지요. 희랍의 인간, 인본 중심주의가 다시 꽃피웁니다. 그게 처음인데 그때는 산업혁명이라 안 하고 상업혁명이라 그랬지요, 돈이 쌓이면서 문화가 번성하는.

그런데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그 육상 무역을 해상 무역으로 뚫어 낸 나라가 있었고 그게 변방의 포르투갈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대항해시대가 열리고 여기서 육로가 아닌 해상길이 열리면서, 동인도·서인도로 가는 길이 열리면서 여기서 해상 무역의 시대가 열리고 이 해상 무역의 시대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열어 놓은 뱃길에 놀라운 효율로 뛰어든 그다음 나라가 도시국가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엄청 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유럽 수송 물량의 거의 한 3분의 2가량을 감당하게 됩니다. 굉장한 상업 도시국가 제국을 만드는데 이 네덜란드랑 동맹을 맺어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영국인데 영국이 영란 동맹으로 스페인을 무너뜨린 다음에 영란 동맹을 깨고 영란 전쟁이 일어납니다. 즉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해상 무역권, 산업기술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력한 국가자본주의의 1세대 모델인데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기술혁명, 산업혁명입니다. 증기기관, 석탄의 시대이고 이 산업혁명이 그대로 벤치마크되면서 국가자본주의가 진화하는데 영국의 성공 사례를 따라 한 그다음 나라 독일, 일본입니다. 물론 미국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국가가 주도해서 다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 산업화 순례의 그다음 여정이 결국 동아시아로 왔지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서 왔고 우리나라가 그 대열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열은 중국이 올라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의 문제가, 한 번의 문제는 거대하게 터졌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화의 순례 과정에서 영국을 따라서 급속히 추격 발전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후발 공업국이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정리했는데 바로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강력한 전체주의로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나서, 부를 쌓고 나서 그 부의 힘을 가지고 무역의 질서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독일과 일본이 재편하고자 하는 무역 질서의 시대는 단일 주체는 없었지만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해상 무역 질서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해상의 시대였고 또 동시에 1900년대 초반 세계 전략을 발표하고 고립주의를 탈피한 미국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전 세계로 나섭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미국과 지지 않는 영국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둘이 절충하던—영국이 더 주도했지요—그 무역의 질서 속에서 그 무역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는 왜 식민지가 있고 우리는 왜 식민지가 부족하느냐, 왜 너희가 정한 대로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무역 길을 뚫겠다라고 해서 베를린·비잔티움·바그다드 이런 곳을 연결하는 철도를 별도로 부설하는 게 독일의 3B 정책이고 자신의 식민지를 지키면서 경제 이익을, 무역의 이익을 지켜야 됐던 영국은 카이로·콜카타, 또 하나 뭐지요? 3C지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 무역 질서가 부딪치면서 전쟁이 터집니다. 그게 1차 대전이고 그 1차 대전을 잘못 정리해서 독일을 프랑스가 너무 수탈해서 독일이 다시 전체주의로 들어가고 히틀러가 탄생하고 2차 대전까지 터집니다.

그리고 이 압축된 역사 후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자유무역의 질서, WTO 체제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WTO 무역 체제는 이제 영국이 주도하지 않고 미국이 설계했습니다. 달러 중심의 세계로 변화했고 그 세계 속에서 영국은 매우 관대한 동맹 전략을 합니다. 나 혼자 부자인 나라는 전쟁을 불러들인다, 영국의 교훈이지요. 그래서 유럽에는 자기와 전쟁을 했던 독일을 구원하는 마셜 플랜을 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일본도 한국전쟁을 기화로 병참기지화하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미국 원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생각보다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우방국들을 잘 번영시키니까 거기서 민주적인 움직임이 잘 커졌습니다.

물론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약화시켰습니다. 독일은 별도의 군대가 없고 나토의 연합방위 체제로 편입시켰고 일본은 평화헌법 속에서 직접 전쟁에 나설 수 없는 헌법적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러한 제한 속에서 긴장을 조절하면서 일본과 독일을 견제했고 일본과 독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또 너무 강해지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통화절상, 마르크화와 엔화의 통화절상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눌렀고 그 순간 그 반사효과 속에서 용처럼 솟아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제품 소니가 안 팔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LG가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토요타가 팔리지 않는데, 닛산이 팔리지 않는데 갑자기 현대차가 팔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단군 이래 최대 호황, 3저 호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 순간 산업화에 도취되어 있었고 흥분했었습니다. 불운인지 행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전개도 사실 아직까지 이해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추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는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체제가 WTO 체제로 완벽히 편입이 되고 거기에 순응하게 됩니다. 사실 국제 경쟁 체제에서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순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산업화를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거대한 국가부채 속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남미는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잘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부국에 이르렀었다는 얘기 간혹 들어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 중에 군수품을 공급하면서 호황을 누렸는데 2차 산업, 즉 공업이 발달한 것은 아니었고 1차 산업 위주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가 막대했기 때문에 그 부를 당연히 제조업에 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서 저희가 이겨 낸 것이고 놀랍게도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 외환위기를 넘어서 국제 무역질서에 순응해서 이제 3만 5000불의 나라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안팎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자축하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대해서 함께 헤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순응하지 않고 산업화의 세례 속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 경과는 제가 이해하는 한 이렇습니다. 1990년대 개혁개방을 덩샤오핑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겼던 교훈 중의 하나가, 격언 중의 하나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도광양회입니다. 즉 힘을 때가 될 때까지는 드러내지 말라, 특히 미국과 한 100년 정도는 적대하지 말라, 덩샤오핑이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충분히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러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좀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지요. 유소작위,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화평굴기, 평화를 내세우지만 '굴기' 결국 대국으로 향하는 그런 노선을 제시합니다. 그 나라가 제시하는 그 나라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할 것은 없고 그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순응했고 미국이 주도했고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 무역질서에 파란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세계 무역질서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이 도왔습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때 중국의 WTO 가입을, 당시 로버트 루빈 장관이었지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대할 때 경제 쪽이 약간 비둘기파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서 WTO 중국 가입을 도왔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을 했고 정말 급성장을 계속합니다. 저도 중국 통계 전문가는 아닌데 하여튼 빈곤도 급격히 줄어들고 좋은 번영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점인데, 2000년대 초반부터 화평굴기를 얘기하고 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중국 CCTV에서 방영된 12부작 역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대국굴

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강국들이 어떻게 대국으로 성장해 나갔는지를 그린 성공 전략을 분석하는 건데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고는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WTO 체제에 진출한 중국 제품과 관련한 논란들이 터져 나옵니다. 중국 화웨이 제품에서 스파이웨어가 나오고, 미국에서 그랬지요. 영국 통신사 보다폰은 이탈리아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웨어, 백도어의 문제가 터지면서 무역질서에 대한 경계감이 급팽창합니다.

그리고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당연히 진행됐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등등 있었고 이제 미중 간의 외교는 거칠어졌습니다. 21세기 중국의 외교는 전랑외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됐고 중국은 아예 그러면 나만의 교역 질서를 짓겠다 그래서 일대일로 전략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중국의 새로운 무역질서 형성과 팽창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패권주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그럴 것은 영국과 독일의 갈등, 1차 대전, 2차 대전의 뇌관이 되었던 그 갈등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시작했던 일본의 야심 이런 것을 데자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미국은 철저히 어느 순간 패권 갈등에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중국이 시도했던 것은, WTO 협상을 돕고 가입을 도왔지만 그다음에는 중국이 제조하고 미국이 수입하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디커플링을 시도합니다. 미국은 소비하고 중국은 생산하고, 그래서 미국 물가도 싸고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 마진이 쌓이면서 그것이 첨단기술에 들어가고 스파이웨어로 작동하고 무역질서는 물론이고 안보질서를 위협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디커플링을 시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치이고.

그런데 이 디커플링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마트에 가면,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 중국산 제품 없이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생필품이든 저가품이든 이제 중국산 제조 능력이 너무 커졌고 저렴했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다음으로 전환하는 게 기술 통제입니다. 첨단기술 유출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디커플링은 쉽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첨단기술이 넘어가는 것만은 제어해야 된다. 이걸 스몰 야드, 빅 펜스(small yard, big fence) 전략이라고 하는데 5G, AI 이런 것 등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통제 역시 첨단기술도 중국에서 제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폰이 바로 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첨단기술도, 또 중국이 보통 똑똑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유출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또 다시 새로운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관세전쟁입니다.

제가 이 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 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긴 얘기 속에서 지금 관세협상에 돌입했고 이재명 정부가 그 첫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3500불 협상은 벌써 꼬이고 있습니다. 아니, 꼬였지요. 어떻게 푸셔야 할지 고민인데 제가 관찰하는 포인트들을 전달드립니다.

EU는 GDP 대비 7% 정도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를 낮췄습니다. 일본은 13% 정도 GDP 대비 투자하는 거 약속하고 관세 낮췄습니다. 그런데 EU가 제일 잘한 게, EU는 아예 기축통화국입니다. 외환보유고 문제가 좀 적지요. 일본도 준기축통화입니다. 엔화도 해외에서 많이 잘 통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조금 약화됐지만—그런데 일본은 또 외환보유고가 저희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환보유고도 일본보다 적고 기축통화도 아닌데 3500억 달러, GDP 대비 20%를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숫자 나왔을 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이게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를 다 모아서 하는 건가. 한 10년 걸쳐, 20년 걸쳐 이렇게 하는 건가. 저는 내막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까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리고 또 협상에 방해될까 봐 차분히 봤는데 뒤통수를, 머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3500억 불은 아마 정부가 다 내는 돈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도 걱정하고 한미 간 통화스와프도 걱정하고 이거 큰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GDP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들이 뭉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금액이 논의됐는지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관세를 높여 놓고 투자규모를 들고 오면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불이든 어떤 규모든 저희가 먼저 들고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EU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갔어야지 왜 이런 금액이 나왔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는 EU나 일본에 비해서는 방위적인 노력을 같이 분담하는 면이 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접경지역이고 북한과 대응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얘기하고 있을 건데 일단 꼬인 거겠지요. 하여튼 3500억 불에 대해서 단단히 꼬였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때 이거 물어볼 거니까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저는 국제협상을 직접 뛰어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노력하실 건데, 3500억 불을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낸다 이런 내용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지 모르지만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반미나 친미 이런 게 연동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는 단 한 가지,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었던 70년을 누린 것은 단 한 가지 한미동맹에 기초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친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중립화시키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에서 영토적 침범 야욕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동맹 속에서 전쟁의 위험을 억제했고 저희는 경제적 번영을 시도했고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결과의 조합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설픈 협상으로 이 관계가 꼬이는 것이 아닌지 진정으로 걱정입니다. 대신에 이제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풀어내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는 25%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는 될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상당한

타격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15%든 뭐든 낮아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원래 FTA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관세가 형성돼서 무역이 타격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이 컸던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밖으로는 협상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내수를 완충해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쿠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소비쿠폰은 오히려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을 돕거나 어려운 부분을 돕거나 생산적인 곳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손실시키는 일입니다. 총알을 낭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뿌려 봐야 두 달 가고 어려운 데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제 권력도 잡으셨고 다수당이시고 하니 제발 저희 조언도 좀 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풀어내야 되는 경제의 문제가 이런 안팎의 도전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수는 부동산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잘 풀어질 수 있는 정부조직체계를 구성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둬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사기 진작을 해 줘야 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조직법에서는 그냥 한 줄 두 줄 세 줄로 처리되지만 이게 실제 처리되면,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과별·국별 이름도 다 바꿔야 됩니다. 간판 다 바꿔야 됩니다. 인원이 그대로 가는 데도 있지만 간판 갈고 책상 갈고 구성 바꿔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는데 이거 물리적으로 자리 잡는 데만 몇 달 걸립니다.

그리고 조직이 설계되면 인사가 따를 거 아닙니까? 저희는 여기 한 줄 바꾸고 말지만 거기 가면 실장 바꾸고 국장 바꾸고 과장 정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 1급들은 그래서 벌써 다 사표 제출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금융위도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조직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세협상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이 안정되지 않아도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서명했으면 탄핵당할 뻔했다라고, 그런 취지까지 대통령이 외신에 얘기했는데 지금 경제조직을 흔들어서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세입세출을 분리하겠다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할 만큼, 조직을 흔들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은 하고 얘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국회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제가 긴 시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관세협상의 연속적인 전개와 이것이 지속적인 이슈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라면 저희가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는 것, 그러나 그런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것, 그저 세입과 세출을 분리한다는 뭐 그런 얘기, 권한이 집중되어서 분리한다는 얘기, 그런데 막상 권한이 분리된 것을 살펴보니 작은 것은 더 작게 하고 큰 것은 권한 없이 크게 해서 잘 안 돌아가는 과거의 모델을 재편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찬성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재위에서 토론 한 번 안 했고 정무위에서는 아예 위원장이 저희 당이시니까 이거는 오늘 낮에 스리슬쩍 내리시고……

다시 돌아가서 비교를 해 드리면, 이게 숫자로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을 했는데—1차 정부조직 개편입니다—그때 세 꼭지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그런데 여가부 폐지는 논점이 있어서 여야 합의로 안 하시기로 해서 현재는 존치했고 결국 두 꼭지지요.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이거 두 꼭지 했는데 이거 얼마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대략 넉 달입니다. 넉 달 걸렸습니다. 두 꼭지, 세 꼭지 논의하는 데 넉 달 했습니다. 지금은……

평가조직도 다시 한번 띄워 주시지요.

윤석열 정부 때 결국 한 세 꼭지 하면서 넉 달 걸렸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열세 꼭지입니다. 열세 꼭지도 1~2개가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관세협상 최첨병에 있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다 포함돼 있고 기후에너지부·환경부 통합해서 만들고 검찰청 폐지하고 성평등부 만들고 이거 간단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 내에 하십니까? 열흘입니다, 열흘. 두세 꼭지 하는 데 넉 달이었는데 이번에 열세 꼭지 하는 데 열흘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다 바꾸는 건 아니니까 전면은 아닌데 이거는 절대 소폭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중폭 혹은 중대형급 조직개편입니다. 국가조직을 중대형급으로 개편하는 데 열흘입니다, 열흘. 기재위 토론, 여가위 토론, 상임위 토론 안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랑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가져오려면 환노위하고 산중위가 연석회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국회에 위원회도 있고 연석회의라는 단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재위하고 금융위원회를 저렇게 할 거면 기재위원회하고 정무위 연석회의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발목 잡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아직도 발목 잡기로 느껴지면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점이 발목 잡기인지 제가 토론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룻밤 새워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뉴스에서 그리고 법사위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게 토론이 됐겠습니까? 최소한의 절차만 거쳤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평가표는 저희 지도부나 정책국하고 조율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헌법기관, 제 개인 양심으로 평가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합격시킬 것도 있어요. 저는 이 점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간다, 일응 근사하게 가는 거고 권한 하고 기관에서도 좋아한다면 저것은 합격해야지요. 저것은 그렇게 논점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정도 판단은 하지요. 그래도 상임위 토론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헌법기관들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성 아니겠습니까?

특허청, 지식재산부로 바꾸신대요. 좋다니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식재산처 합격입니다. 산중위에서 토론 한 번 하고 통과시키시면 되지 않습니까?

과기정통부 부총리로 격상한다, 저는 찬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공계 힘으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저희가 유전이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렇게 가는 것, 예전에 아마 과기부총리가 있으셨어요, 제 기억에. 그러다 장관급으로 되셨는데 이번에 복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십니까?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차관이 생긴다, 좋습니다. 좋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 아

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로만 돼서 치유는 안 되고 예방도 잘 안 되니 금번에 차관이 생기는 김에 이제 처벌 위주의 관점은 좀 벗어나서, 아니 처벌 위주로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진화해서 좀 발전시키자 저는 이런 말씀 외에는 저기에 반대할 게 없습니다. 저거를 뭘 반대합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차관을 만든다, 이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내수시장에서 경쟁해 왔고 제 기억에…… 생산가능인구, 18~64세인가요? 그 생산가능인구는 애도 키우고 결혼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하면서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던 시대가 줄고 64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늘어나던 시대가 언젠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위축이 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장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돈을 벌면 리스크에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이제 성숙 기업이기 때문에 내수 투자를 잘 안 할 경향성도 있습니다. 내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 유인을 촉진하든지 뭘 강제하든지 다양한 기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되지만 내수는 투자가 안 되고, 당연히 내수가 안 되는 거지요. 인구 고령화가 되지 수출과 내수가 디커플링되지, 거기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몇 년째 안 살아나니…… 그것을 못 살린 것은 저희 탓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다 해결을 못 한 것은 맞아요. 그것은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 놓은 문제를 다 못 고쳐서 죄송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받았으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해결하던 문제를 이어 가십시오. 상법 개정안 저희가 시작한 건데 가져가서 지금 잘되지 않습니까? 잘한 일은 받아 가시고 못한 일은 고쳐 내시고, 그게 민주주의고 정권교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그렇게 안 믿어도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사공인차관이 탄생한다, 저는 동의가 됩니다. 줄어드는 내수시장 속에서 지금 또 쿠팡 같은 데는 잘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플랫폼은? 쿠팡은 한국계지만 한국 회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금 외국계가 일을 잘해서 호황을 누려 가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어떻게 됐습니까? 내수시장이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인구 줄지 건설경기 안 좋지 수출 기업들 투자 안 하지 그래서 내수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내수도 온라인에서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프라인에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는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니까 풀어내야 하고 그래서 소상공인차관을 만드는 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푸십시오. 소비쿠폰 뿌려 봐야 두 달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되는 데가 더 잘되지 어려운 데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비용바우처로 도와드리고 에너지바우처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 빚의 굴레 벗어나겠고 직업 전환하겠다 그러면 또 과감히 도와드리고, 그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국회에 와서 그런 것 다 체크해 보니까 그런 기능 고용노동부에서 발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직업교육 아직 약합니다. 수명은 늘어났고 직업은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정년 고용하자. 제가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70세·75세까지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의 직장에서 차지한 사람이 계

속 법적으로 정년을 늘린다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히 청년들이지요.

제가 그래서 정년 고용, 정년 연장을 당연히 반대하고 정년 연장이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해야 된다. 지금 젊은 인력들이 막상 또 제조업에 안 가기 때문에 숙련공이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경직적으로 할 게 없이 기업과 국민들에게 맡기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경직성을 주면 오히려 진행이 안 되지요.

그래서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인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풀어야 되는데, 하여튼 중벤부에 소상공인차관 하는 것 제가 합격 드렸지요.

그래서 제가 세 보니까 합격이 벌써 5개예요, 5개.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은 금방 저희들이랑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논의 안 하셨잖아요. 상의 안 하셨잖아요. 상임위에서 토론 안 하시고.

제가 퇴장이라고 찍은 게 딱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이것은 헌법을 활용해서 사람을 쫓아내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헌법적 편법, 반칙……

저는 사실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저희 보수 진영이 추천해서 되신 위원장님이지만 어떤 사적 이해관계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부마다 알박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임명되신 공공기관장, 위원장 등등 아직 50여 명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 3년까지 건너왔다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문제는 동일하게 처리하시든지, '국정철학에 맞춰서 공공기관장과 위원장은 다 바꿔야 되는 문제니 이제 한번 룰 세팅을 하자'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지요, 그런 논의를 하면. 왜냐? 여야는 교체될 것이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규칙을 세우고 어떻게 타협하자, 이것을 논의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논의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진숙을 신속하게 쫓아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정부조직법을 신속히 일방 처리시킨다. 이것은 퇴장이지요.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장시킨 거고.

경제부처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한 문제들, 관세 협상이라든지 내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세입세출을 분리하겠다라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나오니까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그것마저도 세입세출을 분리하는 과거의 모델에 비해서 좀 잘됐나 봤더니 과거의 모델보다도 못한 겁니다. 낙제지요. 그래서 낙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채점거부 항목을 설정했는데 환경부하고 공소청·중수청 이 문제입니다. 아주 첨예한 문제지요. 기후에너지부는 이름은 좋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고 좋은데, 환경부는 규제 부처이고 지금 산업부에서 쏙 빼 가는 에너지실은 전력 공급 부서입니다. 규제와 공급을 묶으면 공급이 줄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제 뇌피셜로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토론해 보자고 하는데 그 기회 자체를 안 가지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스스로 분석하고 노력하는데…… 영국의 기후에너지부, 독일의 기후에너지부 다 실패했습니다. 경제안보 쪽으로 에너지 조직이 변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국과 독일이 실패한 그 길에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 그대로 들어간다면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은 환노위에서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저희 보좌관들하고 찾아서, 정책국에서 자료 협조 받아서 찾은 사례인데 다 사례

가 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부 폭망해서 전깃값이 올랐는데 전깃값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 경쟁력 약화됩니다. 독일은 거기에다 지정학적 문제까지 겹쳐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영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우리나라한테 원전 수출할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을 가져올지 아니면 그냥 중국 원전을 가져올지 다양한 저울질을 하는 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바로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따라갈 길이 아니라 저희가 경계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열흘 만에 결정하는 것 국민들이 아십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제를 드리지 않은 것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일할지 자료가 전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채점 거부라고 한 겁니다. 답안을 내십시오. 발목 잡지 않고 채점할 생각입니다. 그것 채점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여곡절이 어쨌든 과정이 어쨌든 새 정부가 탄생했고 새 정부가 일하면서 정부조직 바꾼다는데, 말이 맞는데 저희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내용 자체가 없고 토론 자체를 안 하고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꼬여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조심해야 합니다.

(「걱정이 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말 걱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듣는 얘기인데, 저희가 탈원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탈원전이 가져왔던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원전을 신념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탈원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탈원전 할 때 과정 관리가 안 되면 전깃값이 폭등하고 제조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루면서 탈원전의 버튼을 눌렀냐 저는 그걸 묻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꼭 파악해 달라고 요청드린 게 있는데, 제가 민간인일 때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원전 복구하느라고 한번 난리법석이 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탈원전을 해 놨는데 전깃값이 정말 폭등하게 생긴 거예요. 전력 공급이 잘 안 됐던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년 차에 부랴부랴 원전 계획을 어떻게 다시 점검하고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난리를 쳤던 적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걸 파고들고 문제 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시니까 그 사례를 벤치마크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점 거부고요.

검찰청, 중수청·공소청으로 하는 것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생범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고 또 법률전문가들이 다 지적하시는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폭넓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과감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밤새서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한 삼사십 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소·수사 분리 필요하면 해야지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소·수사를 분리하면서 이미 불거진, 앞으로 불거질 일이 아니라 이미 불거진 핑퐁 문제, 그래서 민생범죄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 사기·횡령·배임 이런 것들이 6개월 이상 늘어나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변호사, 주변의 경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답이 있는지, 답을 같이 가져왔는지, 벌써 2년이 넘게 진행된 추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가져왔는지만 저는 행안위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지금부터 1년 동안 고민하시겠다고 합니다.

새집을 짓기 전에 옛집을 허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사이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사이에 피해는 어떻게 막습니까?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요. 상상력을 발휘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방법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윤호중 장관님과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이 많이 상의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안한 거는 이거 1년 후에 법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칙에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달 정도만 집중토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부족하면 플러스 한 달 정도, 원 플러스 원, 한 두 달 정도, 한두 달 토론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못 하고 있는 문제는, 이유는 여야 신뢰가 부족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에 저희 모두 다 이해하는 저희가 좋아하는 충성 지지층이기도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문제, 그들과 중도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늘의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만들어 낸 거 아니겠습니까?

3대 특검법을 연장하는 것을 좀 최소화하고 정부조직법 통과하는 것을 합의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만에 깨지고 정부조직법 자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고 저희는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저의 길을 잘 헤쳐 가고 복구해 가겠습니다. 성찰할 점 성찰하고 반성할 점 반성하고 재건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의 운전대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여야 정쟁이 격화되고 격한 표현들이 하도 오고 가니까 서로가 서로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저희 얘기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언론들의 얘기까지 다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들을 얘기는 들으셔야 되고, 몸에 좋은 이야기 입에 쓰지 않겠습니까? 좋은 얘기가 아마 귀에 쓰실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는 지금이라도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 논점 없이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상임위 토론 한 번 안 했다는 건 진짜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채점거부 1건 이거는 최소한 집중 통과를 해서 저희랑 세계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때 일방 통과를 해도 오히려 정부 여당도 명분이 좀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중수청·공소청 분리하는 거는 제가 아마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검찰개혁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는 당론을 제시한 적도 없고, 검찰개혁을 하는데 좋은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혁으로 이미 불거진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경찰청·공소청·중수청이 어떻게 일할지 업무체계만 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체계가 없이 청들이 알아서 잘 협력을 해라? 그게 핑퐁 문제로 불거진 근본 원인인데 그러면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짭니까? 제도는 평균인의 관점 혹은 조금은 나태한 사람 관점에서 짜는 것이고, 행정기본법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시하면 며칠 내에 답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강제 조항이지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착하고 유능하고 다 성실

한데 며칠 내에 답변한다는 그 조항을 왜 넣었겠습니까?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청·검찰청·공소청은 어떻게 수사 지연을 안 하고 업무 지연을 안 하고 핑퐁을 안 친다고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고 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한두 달 토론하면 접합점에 이를 수 있고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때 가서 통과시켜도 정말 명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채점거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것이고. 어차피 금융부처는 다시 보기로 하셨으니까 된 거고.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 이것 통과시키시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처만 작게 탄생하는 건데 재정경제부도 약화되고 기획예산처도 약화되고, 아니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이 지휘하면 기획예산처든 재정경제부든 지금의 기재부도 무슨 저항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조직으로 치환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다뤄야 되는 오히려 큰 대미 협상의 문제, 내수의 문제 이런 것을 조직개편 때문에 또 한 6개월 1년 손을 놓을 수도 있는데 그 리스크까지 느껴지니까 이것은 안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제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여러 경제관료 오비들 의견 다 들어서, 차라리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 모델로 재시도해 보자 그 얘기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부처들 변해 온 그 표 좀 다시 띄워 주실래요?

이게 눈으로 보면 너무 선명한 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로 하다가 기획예산처는 작아서 문제, 재정경제부는 큰 데 권한이 없어서 문제, 금융감독위원회도 작고 권한이 분산되어서 문제,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서 기획재정부로 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붙여서 금융위원회로 했고 그래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온 겁니다.

물론 이게 완벽히 작동했다?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에 문제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그래서 조직개편 하는 건 좋은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판박이처럼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때랑 똑같이 가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획예산처는 작아서 문제였는데 더 작게 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똑같이 금융정책 기능을 빼 버렸어요. 재정경제부는 권한 없이 크기만 해서 문제였는데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낙제이고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대미 협상의 문제, 조직 불안의 문제만 가져올 수 있고 내수를 키워 내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극히 특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그냥 차분히 일을 하든지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낙제를 드린 겁니다. 기분 나빠 하시기보다는 조언이라고 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포함은 안 됐는데 제가 관점이 부족한 게 3개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정부조직은 정파의 소유물도 아니고 사적 소유물도 아니고 어차피 국가의 조직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이고 세계전략의 문제이고 공직자 사기 진작의 문제입니다.

인구문제, 저희 윤석열 정부 때 제안한 인구전략기획부지만 인구문제 첨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노동·국방·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것은 왜 안 가져오신 겁니까? 이런 게 너무 급하니까 빨리 탄생시

키자고 하면 저희가 사실 거부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안했지만 이어받을 건 이어받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미일 협력, 기본 기조를 이어받으신 것 저는 긍정 평가합니다. 상법 개정안,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지만 먼저 시도해서 자본시장 발전시키는 것 저는 평가드립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조직개편에 녹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전략이라는 것이 제가 얘기한 대미 협상 그런 문제입니다. 무역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대한민국 무역은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 시장, 남미·유럽·북미·인도·아프리카까지 다 다뤄야 됩니다. 그 나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축적과 인맥 축적이 필요한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좀 해 봤는데 그런 것 너무 취약합니다. 외교관으로, 외교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을 미국처럼 외교부를 아예 국무부로 승격시키는 것도 해 볼 만하겠다. 저희 보수정부가 탄생하면 저는 반드시 시도하자고 권유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보수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먼저 하면 됩니다, 누가 해도.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비판이 아니라 조언인데 공직자 사기 문제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은 개발연대에 기본 설계를 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이끌어서 산업화를 시키고 민주화 시대를 헤쳐 왔고 외환위기 이후에 사후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 변동 속에서 항상 공직자들이 많이 다쳐 왔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쳐 왔습니다.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조직만 떼었다 붙였다……

람보르기니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간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저는 람보르기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공무원도 만나 봤고 영국 공무원도 만나 봤고 다 만나 봤는데 우리나라 공직자들 우수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정치 환경이 좋지 않고 민간에 비해서 처우를 생각하는 면이 없이 오히려 숫자만 자꾸 늘리는 게 아닌가. 제가 정확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단언은 안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 합니다.

일단 제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직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또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잠깐 제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상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행안부장관은 어디 있습니까?)

○의장 우원식 아니, 교섭단체 간에 양해를 해서 차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부처 장관이 다 나와 있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박수민 의원 잠깐, 화장실만……

○의장 우원식 다녀오세요.

(○유상범 의원 의석에서 — 저희 대표께서 양해해 주신 건 3시간입니다. 그런데 차관이 지금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본회의 이석사유서. 회의 일시, 2025년 9월 25일 14시부터. 출석대상 기관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리 출석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유, 추석 대응 상황 점검 등. 대리출석 시간, 26일 05시부터 08시.

지금 몇 시예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도장 다 찍어 놓고……

(「사기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사기라고요? 이게 서로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다 찍고 했으면 수석께서는 알고 있는 일 아니에요?

(○유상범 의원 의석에서 — 3시간은 알고 있는데 어젯밤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좀 알고 와서 항의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일 그리고 교섭단체 간 도장까지 다 찍은 일을 가지고 수석이 와서 항의하는 일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지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하는 의원 있음)

내가 혹시 졸릴까 이렇게 생각해서 깨워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조용히 확인하시든지……

(장내 소란)

본회의장을 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저 방송 카메라 또 여러 이 안의 이 모습이 다 보여집니다. 정당들이 국회의장한테 이것저것 항의할 수도 있고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당 안에서 소통을 통해서 또 본인 교섭단체를 통해서 한 일을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항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지요.

예민해져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서로 지켜야 될 예의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하시는 말씀을 예민하게 반응하시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하면 내가 뭐 하러 그러겠어요?

(「그냥 물어보면 내용이 이렇다 이런 얘기 하면 될 걸 또 저쪽에서 고함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 의원 있음)

내가 고함치도록 만들었다고?

(「아니, 상대방에서 고함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하는 의원 있음)

일반 의원들이 얘기했으면 내가 대답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설명하고 말았을 것 아니에요. 수석께서 하시니까, 이것은 교섭단체가 동의해 준 건데 수석이 몰랐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유상범 의원 의석에서 — 몰랐습니다.)

(「교섭단체대표끼리 기자회견 한 것도 없는 세상이 됐는데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꼼꼼하게 잘 챙겨 보세요.

(「박수민 의원님, 설명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수민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무제한토론이 처음이라고 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제가 무제한토론 1호 국회의원인데 저희가 왜 이런 배경 속에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 있느냐?

이게 좀 신기한 기사인데 5월 17일,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결과 전에—이게 제가 자꾸, 존함을 안 밝힐까 했는데 주간조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신 거니까 밝혀도 되겠지요—강원택 서울대 교수님이 하신 인터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꼭 소개해야 저희가

왜 정부조직법을 무제한토론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맥락이 이해되기 때문에 조금 긴 기사지만 제가 차분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수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면 연성독재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엄은 짧고 후유증은 길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가 이를 해제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2시간 38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6개월째 리더십 없이 표류하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계엄의 후유증은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만 해도 미증유의 정치적 분열을 겪었음은 물론 격변하는 대외 정세에 거의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했다. 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파산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일을 너무 자주 겪고 있다. 2004년 이래 국회의 탄핵소추만 세 번째. 체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드러났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계신 기사인데요. 이때 시점을 지나서 대선 결과는 나왔지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100일 좀 넘게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논의된 내용들이 지금은 어떻게 투영되는지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제의 안정성은 이미 깨졌다. 지난 5월 13일 만난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진단이 이랬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강 교수는 현 체제가 지속되면 실질적 민주주의가 크게 퇴조할 것을 우려했다. 헝가리나 폴란드처럼 선거만 잘 치러지는 연성독재가 눈앞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는 가운데 한국도 그렇게 갈까 걱정이다라고 했다. 오는 6월 3일 6공화국은 다시 한번 대통령을 뽑는다. 강 교수에게 전환기의 리더십을 묻는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대담하는 자료입니다.

질문과 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곧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먼저 짚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통합이다. 정치적 분열이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너무 격렬해졌다. 한국은 지금 불안하다. 국내 정치적 리더십이 없었던 상황 속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중국은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나. 국민들 스스로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데 이번 대선이 그런 불안을 일단락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나. 국민이 통합할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저희가 6월 3일 대선을 놓고 치열하게 대결하던 상황 그 전에 정치권의 석학은 이런 관찰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이다.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너무 깊어졌고 외부 환경은 어렵다. 그러니 국민들 스스로도 지쳐 있으니 이런 불안을 일단락하는 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저희가 통합 속에 있었고 갈등을 치유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면 제가 지금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무제한토론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의 역할도 그런 맥락에서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이렇습니다.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폭넓게 사람을 쓴다는 걸 보여 줘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민련과 공동정부를 구상할 때 총리는 물론이고 경제·사회 분야는 전적으로 자민련에 인선을 맡기지 않았나. 그만큼 과감한 정도의 균형 또는 탕평 인사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좀 유능한 사람을 썼으면 한다. 대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능해야 하지 않겠는가'.

5월 17일이니까 벌써 네댓 달 전입니다. 인사가 제일 중요하고 통합의 정부를 기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시도해 봅니다. 예상보다 객관적인 좀 신선한 기업인들을 발탁했던 느낌은 저희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터졌고 그 지점은 강력히 지적드렸습니다.

어쨌건 정부가 유능해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크게 동의가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이게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력자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만큼 거센 격랑 속입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고 국내적으로 국민 갈등이 심각합니다. 유능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꼬인 지점들이 이미 보입니다. 3500억 불 대미 협상이 그렇고 그리고 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대법원장을 그만 놔두시지 대법원장을 흔드는 여당의 움직임……

네댓 달 전에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통합에 대한 기대, 유능에 대한 기대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거국내각에 준하는 정부 구성을 의미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의 답변입니다. '거국내각까지는 어려워도 최대한 균형 있는, 안정감 있는 내각이 좋겠습니다. 균형이란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정감이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책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내각을 꾸려야 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인사에 너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국내각은 이것은 뭐 진영을 넘어서는 내각이기 때문에 좀 너무 폭넓은 것이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잘 탄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뭐 연립내각, 거국내각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처럼 아마추어적인 일을 하지 않고 유능하고 안정적인 내각이 탄생하고 그 내각에게 권한을 좀 많이 주자, 일을 잘하게 하자, 그 세세한 인사에는 너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점이 읽히는데 이것은 제가 완벽히 동의가 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님 때까지니까 한참 전에 정부를 벗어났는데 그 전에 제가 근무했던 경험, 그 이후에 관찰했던 경험으로 보면 대통령 권력은 굉장히 집중이 되고 그게 또 초기에 집중돼서 지지율을 형성하다가 이삼 년 지나면 확 빠지고 그리고 총선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정부가 흔들리고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났었고 특히 이런 패턴에 대해서 저희 보수 정부가 각성할 점이 많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지금 내적 갈등도 심하

고 대외적 불안도 심하니 권한을 주고 좀 유능하게 일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내각, 권한을 좀 가지는 내각으로 가면 좋겠고 그게 오히려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저는 조금 동의가 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청나라에 그 유능했다는 황제, 아마 건륭제로 기억이 나는데 만기친람의 끝판왕 그런 황제가 계셨는데 유럽에서 나폴레옹, 그러니까 새장에 갇힌 새를 구하는 그런 우화까지 나오는 그 실제 롤모델의 청나라 황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만기친람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청나라가 쇠락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나오는 부침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을 폄하하고자 하는 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 권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중심으로 나라가 너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의 이런 지적이 그런 관찰 속에서 나왔다,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좀 읽어 나가야 될 함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대통령직이 어느 순간 갈등의 아이콘이 되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이다. 결정적으로 한국 사회가 양극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청산과 관련이 있다. 내 경쟁 세력이 적폐라는 건데 정치적 경쟁은 다름의 문제이지 선악의 구도가 아니지 않나. 다음 대통령은 어느 쪽이든 그런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니 더 이상 이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예민한 대목이고 저희가 그래서 더 깊이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이 갈등의 아이콘이 됐다. 사실 이거를 제가 평가할 능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미리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뭐 그런 견해를 밝히는 게 오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수 정당에 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양극화가, 보수 진영 입장에서지요. 진보에서는 또 다르게 보실 겁니다, 시점을. 보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청산과 양극화가 된 것이 관련이 있다, 보수 정부 시각에서 이거는 이해가 되는 시각입니다. 진보 정부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모범 답안이십니다. 정치가 경쟁 세력인데 적폐라는 용어 자체가 선악의 구도이고 청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미 사법절차에 맡겨진 윤석열 대통령은 내버려두는 게 좋지 않느냐. 대통령선거 이전에, 5월 7일에 이미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법절차에 맡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라는 새로운 사법절차에 맡겨졌고 동시에 저희 국민의힘도 사법의 대상이 돼서 지금 여야는 협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 협치에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3대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얘기했고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통합해서 다루는 것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듯이 그 여야 합의는 하룻밤 만에 깨졌고 놀랍게도 그 여야 합의는 정치인 간의 배신이나 다툼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저희 모두가 고민스러워 하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깨지고 옴짝달싹 못 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논의도 없이 열흘 만에 통과되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이 기사와 연계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토론하고 싶은 내용의 전개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기적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 준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이러합니다. '여럿이 있겠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을 한번 보자. 그와 김영삼·김대중은 그야말로 적 아니었나. 군사정권의 핵심과 민주화운동의 거두들이었으니. 하지만 6·29 선언으로 타협을 하고 그다음 체제로 넘어오자 화해와 협력을 유지했다. 노 전 대통령이 참용기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참고 용서하고 기다린다고. 정말로 그는 국회 개원식부터 갔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여소야대가 된 1988년 13대 국회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일곱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민주화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 중 세 번은 거부권 행사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꼭 극단적 대립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태우 정부 이전 5공화국은 정말이지 선악 구도로 정치를 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국면이 바뀌면서 노 전 대통령과 양 김이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 준 것입니다.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때만큼 우리가 더 적대적일 수 있나'.

여기에 등장하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정파 간의 평가와 개인적 선호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도했던 합의와 협치의 흔적 그리고 그 당시 상황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 그 점은 제가 이 대담 기사를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점에 주목하고 느낌을 갖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그때만큼 잘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당연히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인 것도 팩트입니다. 이제 100일도 지났습니다. 저희가 새길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살피겠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만큼 적대적인데', 즉 옛날만큼 감정적으로는 지금 적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비판과 공격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틀에서는 정치지도자들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만약 다음 정부도 대통령도 되었고 입법부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라면 다시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것이다'.

아마 교수님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 가능성을 점치고 계셨고 그래서 이런 점을 선제적으로 미리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 정부도 대통령도 되었고 입법부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라면 다시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것이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요즘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얘기 같습니다. 외부에 전달되지도 않고 민주당에도 전달되지 않지만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전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기사도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런 당위적인 얘기보다는 정부가 5년 내내 마음대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00만 표 넘는 격차로 대선을 이겼다. 직후에 치러진 총선도 범여권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민주당은 80석을 간신히 넘겼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겨 놓고도 광우병 촛불집회가 열렸다. 권력을 실제로 잡고 나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거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여당이 서울·경기도에서 지면 대통령 리더십이 약화될 것 아닌가. 실제로 권력을 갖게 되면 국민은 책임을 묻는다’.

이것은 여야 모두가 귀 기울일 지점입니다. 즉 협치나 상호존중이나 이런 것이 기사도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당위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 국가를 경영하고 정치를 이끌어 가는 기본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 표가 넘는 격차로 이겼고 국회의원 과반도 훌쩍 넘겼고, 그런데 결국 광우병 파동은 터졌고 촛불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가 어떤 또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점 정확히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자 구도가 된 이번 대선후보들에게 그런 대국적 정치의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 후보들이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이겠다는 걸 명료히 했으면 합니다. 다들 지치고 피곤합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행도, 대대행도 탄핵되는 굉장히 웃기는 상황입니다. 국내적 지지를 골고루 받는 안정감을 가진 대통령이라야 밖에서도 신뢰를 받습니다. 큰 틀에서 정치를 봤으면 합니다.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리더가 이해하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YS는 문민정부라는 시대적 요구를 하나회 척결 등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DJ는 외환위기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갈등과 분열을 푸는 게 시대적 과제입니다’.

강원택 교수님은 갈등과 분열을 푸는 게 저희가 문민정부를, YS가 문민정부를 탄생시켜서 하나회를 척결한 것 그리고 DJ가 외환위기를 풀어내려고 노력했던 점, 그런 역사적 업적과 대등한 가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3자 구도가 아마 3명의 최종 대선후보들을 얘기하는 말씀 같습니다. 셋 다 모두 대국적으로 보고 DJ의 외환위기 극복처럼, YS의 문민정부 구축처럼 이 시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갈등과 분열을 푸는 거다, 국민들의 피로가 극심하고 외부적으로 혼란스럽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5월 10일에 제안하신 건데, 지금 한 너덧 달 후인데 상황은 이런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민한 질문이 또 옵니다. ‘내란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권력 잡은 쪽은 또 보복할 것이다.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강원택 교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 답변이 실현될까 걱정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보복의 정치, 싸움의 정치, 갈등의 정치를 계속해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걱정할 뿐인데, 제가 그나마 1년 정도 국회에서 관찰해서 오늘 여러 가지 생각과 제 견해를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열면서…… 아니지요. 민주화를 열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권 변동은 수평적으로 계속 일어났

지만 그 수평적 정권 교체가 평화적 정권 교체까지 가지 못했고 그 비평화적인 보복적 정치 교체 속에서 저희의 정치 갈등은 깊어져 왔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끊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끊어 낼 만하다 하는 것이 강원택 교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칼자루는 여당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란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지금 3대 특검법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연장하시고 또 끝없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민주당 측의 얘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는 계엄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 계엄을 다루는 과정이 가장 헌법적으로 잘 진행되고자 최소한의 헌법적 통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러나 저희의 그런 노력은 국민께도 잘 전달되지 못했고 저희는 오로지 다양한 내란몰이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갈등의 정치를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복의 정치를 또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이 기사에서 더 크게 읽힙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유독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졌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서부지법 난동이 있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에 불복해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처럼 결국 내 뜻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아니었나.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하든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서부지법 폭동도 헌재 판결을 앞둔 보수단체의 집회도 민주당의 대법원 공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잘못된 거다. 사법부는 그냥 사건이 있으면 판결을 하는 거다. 정치적 타이밍이 선거를 앞두고 예민하다고 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식의 불만 제기는 위험하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17일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서부지법 사태의 폭력성,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셨고 동시에 헌재 앞에서의 보수단체 집회도 지적하셨고 민주당의 대법원 공세, 아마 이때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이 됐던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민주당이 대법원에 공세를 하던 시점에서 역시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독립의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독립돼야 민주주의가 건강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성만큼은 지켜야 한다. 여도 안 되고 야도 안 되고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법 폭동도 잘못된 것이고 헌재 앞 보수집회 시위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도 잘못된 것이다. 뭐 깔끔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단순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길게 설명드리고 계속 요약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5월 17일 그 격동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걱정은 지금 9월 말에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격받고 있고 사법부는 협박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민주주의의 안정성 차원에서 평가해 달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법부를 장

악하는 것이다. 헝가리는 정년을 70에서 62세로 확 낮췄다. 그러면 법관들 퇴직이 늘 것 아닌가. 빈 자리에 내 편을 집어넣는다. 폴란드도 비슷했다. 우리 대법 판결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대법원 판사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굉장히 걱정이 됐다. 헝가리·폴란드가 했던 일이다. 이러면 삼권분립이 깨진다'.

저는 대한민국을 높게 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폴란드·헝가리 이런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비교된다는 자체가 저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정치학자께서 헝가리·폴란드 상황을 놓고 한국을 걱정하는 이 상황을 뭐라 말씀드려야 됩니까?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혹은 대법원장이 알아서 거취를 정해라 등등 이런 압박을 왜 하시는 겁니까?

'사법부를 건드리면서 연성 독재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러면 체제 자체가 권위적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도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전례도 없고 외국도 그러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나 하는 것이지 판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법부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선 전 5월 17일에 한 인터뷰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부른다든지 이런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의 독립성이 없으면 사법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저희 법조계에서 얘기하듯이 옛날처럼 원님재판을 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저희가 사법부를 분리해서 그렇게 공들여서 유지하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해서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사법의 중립성을 지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 지금 다섯 달이 지나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전례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외국도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 참 걱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정부 여당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추천권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등등, 이때 정부 여당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읽으면서 분석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법부가 기왕 정치적 관심을 받았다면 중립성을 높여 주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임명하는 식입니다. 여당 몫, 야당 몫 같은 건 없애 버리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려면 무난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도 없애고 법원 내부에서 추천하는 등의 형태로 가야 합니다'.

제가 100% 다 동의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재밌는 대목입니다. 즉 사법부가 뭔가 헌법적 논란, 정치적 논란 속에 있고 주목을 받아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 촉발이 무엇이든 내용이 무엇이든 결국 방향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이는 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도 없애고, 이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뭔가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인 거리는 더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법원 내부에서 추천하든지, 이게 꼭 옳은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외부 개입을 좀 줄이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치적 논점이 제기가 됐다면 이것을 다시 독립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자 이런 방향성인데 이것은 정말 완벽한 방향성 같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 개입을 해서 압박한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저희가 발전시켜야 되는 헌법적 관행에 벗어납니다.

사법부를 기왕에 만든 것은 재판을 중립적으로 받고 객관적으로 받자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촉발이 됐든 무엇이 문제가 촉발이 됐든 그 방향성은 독립성을 늘려 나가는,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완벽히 동의가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같이 임기가 남은 대법원장 특정인을 지목해서 협박성 발언이 쏟아지고 청문회로 부르고 하는 정도의 방법은 지금 제안된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가 되었다가 퇴행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답변은 이러합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갈 수 있어서 걱정이 된다. 그런 나라들은 선거는 제대로 치른다. 그런데 제도적인 형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입법부까지 장악해 놓고 만든 법이 이상해도 사법부가 역할을 못 한다. 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장악되고 만들어 놓은 법이 이상해도 사법부가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살아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가 됐던 나라들이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걱정을 하셨고, 여기의 요체는 선거는 제대로 치러진다는 겁니다. 선거는 계속 열리는데 행정부가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그게 내각제가 됐든 대통령제가 됐든 결국은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지켜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종 안전판이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견제 장치인데 이게 살아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후퇴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사법부 독립성은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법원에 문제가 있고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룰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 속에서 압박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민주당도 다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년간 탄핵을 세 번 겪었다. 대통령의 리스크인가 대통령제의 리스크인가’, 굉장히 예민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제의 리스크다. 대통령제는 내각제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게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미국은 지금까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 뭐 미국 정치라 해서 항상 좋기만 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20년간 세 번의 탄핵소추를 겪고 두 명은 실제로 물러났는데 이제 대통령제 안정성이 깨진 것 아니겠는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탄핵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된다. 국민 모두가 그럴 것이다. 중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 그때 한번 확 바꿔 가지고 탄핵시키면 되겠네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민주주의 퇴행의 우려를 넘어서 이제 탄핵이 빈발하면서 대통령제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지경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견해에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력과 상황인데 제도 탓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선상에 올랐던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탄핵의 상황을 관찰하고 또 견제하고 때로는 응원했던 그 상황들, 그 상황들이 결국은 함께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춘기다라고 저는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민주주의를 확고히 확보했고 계속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고 있지만 그 정권 교체가 성숙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치 교체 속에서 계속 정치 갈등이 터지고 그 한가운데에 정치 보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한쪽은 내란 청산이라고 하고 한쪽은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진실은 둘 중 어느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인식 때문에 대통령제를 그만해야 한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제 쉽게 쉽게 중간 국회의원선거에서 지형을 바꾸고 탄핵을 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으로 읽힙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거기에 기반하는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탄핵 국민행동 같은 게 생겼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비슷한 일이 생길 거다. 만약 이번 대통령도 삼사 년 하다 물러난다면 이 시스템은 끝난 것이다. 왜 이런 제도를 유지하나? 실패의 비용은 국민들이 다 지고 있지 않나. 대통령의 권위도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다. 큰 정치인의 카리스마나 권위,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 그런 것이 이제 없다. 대통령이 쉬워진 거다. 분단국가에서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할 대통령이 갈등의 정점에 있고 단임제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나라의 몸뚱이는 커졌는데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저희 300명의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계속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을 위해, 진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해서 탄생시키고 하는 대통령이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교수님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 반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시작된 탄핵 국민행동 같은 사례를 들고 있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비슷한 일이 생길 거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담은 대선 전 5월 17일에 하신 겁니다. 참 이것을 반박드리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 대 강 구도가 펼쳐지고 있고 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무제한토론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온 이런 말들도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큰 정치인의 카리스마나 권위,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 그런 것이 이제는 없다. 대통령이 쉬워진 거다.

예전에 선배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카리스마나 무게를 형성했는지 그것도 참 아스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건지, 가능은 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도적인 문제가 오히려 장점과 단점의 문제에서 단점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교수님의 지적이십니다.

다음 대담입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총리 중심 내각이 실질적 정책을 집행한다. 대통령은 정무적으로 총리와 내각을 견제하고 필요하면 인구, 기후 같은 장기적 과제를 책임진다. 야당 총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재밌는 게 요즘 장관들 일할 만하다고 하더라, 용산에서 전화가 안 오니까. 그러고 보면 장관들에게 제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는 개별 부서의 자율성이 많이 사라졌었다. 국정 철학에 맞는 장관이라면 좀 맡겨야 한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데 저희가 실현 가능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각제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장관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총리를 국회가 선출해서 총리가 내각을 이끌고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면 되고 대통령은 큰 어른으로 인구, 기후 같은 장기 과제를 다루면 된다, 정치 갈등의 거중 조정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느껴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제도가 뭔가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판단하기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건 프랑스식 이원집정제에 가까운 형태인가?’. ‘그냥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자. 행정부 안에서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 사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야 내각제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싶어 한다. 위기 상황에는 대통령이 통수권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 점이고 중간 단계 차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형태로 가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권한을 정확히 배분해야 한다. 부통령제는 어렵다, 권력 누수가 생기니까.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낫다’.

즉 내각제가 어떻게 보면 더 안정될 수 있는 장치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동의드렸듯이 장관들의 권한을 좀 늘려서 책임 있게 일하게 하고 국회가 더욱 개입할 수 있도록 그 내에서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이런 정도의 제안이신데 정치 갈등을 순화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완벽히 평가드릴 수는 없지만 교수님의 고민이 많이 느껴집니다. 현행 대통령제 속에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는 어쨌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분열과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교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정부조직법 무한토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5월 13일에 한 토론이 오늘날 정확히 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헌재가 하는 것이 맞나, 미국처럼 의회가 하는 것이 맞나?’. ‘미국 상원의 기능을 헌재가 하는 셈인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헌재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나. 결국 문제는 그 구성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탄핵도 탄핵이지만 정치인들이 걸핏 하면 문제를 헌재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과도하다. 타협을 통한 정치의 범위가 더 큰데 정치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는가? 총선에서 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다 지는데’.

현실에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상당한 통찰입니다.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상원이

하든 헌재가 하든 그런 걸 물었는데 대한민국 헌재도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법적 중립성이다, 그것만 잘 지켜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사건을 사법부로 가져가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 상의해서 이것을 풀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정치인들 스스로 상의하지 못했고 결국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당이든,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물론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총선에서 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제일 크게 지는데. 참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정치의 비례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저희는 제도를 운영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의 정치 개입은 저희가 사법으로 심판한 바가 있습니다. 공천 개입이지요.

그런데 총선의 실패는 또 여전히 고리를 끊었지만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가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상필벌, 권한책임 기본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런 거를 논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여당 장악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표적 단면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3김 시대의 역작용으로 만든 게 당정 분리인데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법 이전에 정치의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과거의 궤적이고 그것에서 미래를 기대하고 조언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제 그리고 그걸 정치로 다뤘어야 한다는 문제,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을 예단하지 못했지만 계엄 이후의 탄핵 과정에서 철저히 노력했던 것은 전달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헌법적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해제에 찬성한 것도 헌법 때문이었고 계엄 이후의 절차적 통제도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저희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내란 공조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극복해 갈 것이고 저희는 묵묵히 그 길 끝에서 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갈등이 깊어지고 정치적 치유가 늦어지는 것, 통합이 늦어지는 것의 책임은 이제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이 점만은 선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필요합니다. 2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되니 대통령의 정통성이 강화됩니다. 인위적 단일화 등 정치공학적 접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될 것입니다. 개헌할 일은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선거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비용의 문제는 핑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결선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대통령이 탄생해야 정치적 정당성이 높아지고 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택하게 된다, 극단의 정치를 저희가 벗어날 노력이 커진다, 이 점이 즉각적으로 동의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 나갈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게 국민의 여론인데?’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의원 정수는 늘려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까닭은 경쟁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적인 정책과 임무를 내세울 수 있는 집단이 등장해야 기존 정당들이 긴장합니다. 우리는 독과점입니다. 중앙에서 보면 과점, 각 지역으로 내려가면 독점, 비례 국회의원을 50명가량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다당제 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당이 과반을 얻기 어렵고 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많은 정치가 바뀔 것입니다. 결국 지역구 의원을 줄이거나 비례의원 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나라를 하나 세우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하면서 웃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매우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이런 포퓰리즘, 이것도 저희가 보면 인기영합적입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은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당도 폭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 그걸 위해서 비례대표를 차라리 늘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제안이고 그 제안 속에서 1당 독주의 과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가 살아난다는 지적입니다. 상당히 동의가 되는 지적이고 저희가 고민할 바입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에 기획예산처가 탄생하는데 세출을 직접 편성하는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작아서 문제였던 기획예산처를 더 작게 탄생시켰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누차 지적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칼럼을 통해서 논의하면서 한번 토론을 드려 보겠습니다.

‘李, 재정 써야 할 때 쓸 재정이 있느냐가 문제’, 아마 이(李)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6월 20일, 출범 직후의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2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신산업 투자, 건설산업 지원 등도 있지만 절반을 훌쩍 넘는 13조 2000억 원이 국민 일인당 15~50만 원씩 나눠주는 민생지원금에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했다.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경기침체가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서민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불가피하다.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내수 침체에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문제는 돈을 쓰는 방법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 주는 지원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승수효과는 0.33에 불과했다. 세금 1조 원을 써도 국내총생산은 33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뜻이다. 반면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면 0.86배의 승수효과를 가져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현금 지원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투자에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란 의미이다’.

자주 들었던 기사의 톤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부채를 늘릴 여력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다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 저희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가 피땀 흘려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 고마운 재정 여력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이든 효과적으로 써야 됩니다. 효과적인 방식의 다른 이름은 생산적인 것이고 비효과적인 방법은 소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쓰는 것은 두 달짜리 효과이고 어려운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집중해서 돕든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해서 돕든지 그게 바로 재정을 쓰는 방식이고.

그리고 결국 빚을 내도 좋은데 그 빚보다 더 큰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인 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SOC는 그런 경향이 높고 소모적인 건 작다 하는 게 이 기사의 뜻인데 저는 이렇게 흑백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인프라는 인프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 하나 지나가지 않고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는 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현금은 사회공동체를 안정시키고 소득분배를 강화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다시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지출입니다. 그래서는 그것은 생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이렇게 다 뿌리면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고쳐지겠습니까, 생산적인 인프라가 탄생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고쳐지겠습니까? 굳이 0.33, 0.86 이런 승수를 쓰지 않더라도 뜻이 명확합니다. 생산적인 곳에 쓰느냐 소비적인 곳에 쓰느냐입니다.

기획예산처를 이번에 만들면 이런 문제가 고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심화되는 겁니까? 저희는 선거 때 그리고 선거 이후 새정부 출범 상황에서 소비쿠폰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여당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계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처를 작게 만들면 더 쉽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은 당연히 상임위에서 토론됐어야 합니다. 전혀 토론된 바가 없습니다.

이어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더라도 저소득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 소득이 낮을수록 받은 돈을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인 기초·차상위 지원이 1조 5000억 원으로 전체 11.4%에 그쳤다’.

제가 말한 것 그대로 하고 있지요. 저는 이 기사 미리 읽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저희 보좌진들이 뽑아 줘서 소개하는 건데 정확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소득이 낮을수록 받은 돈을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 더 넘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통합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경제적 탈락의 위협에 노출되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돕는 것이 공동체이고 그런 것 돕자고 경제도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다 잘살고 똑같이 다 부자가 되고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그것은 다름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열을 평등화해서 하향평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각자의 재능과 소양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했고 그 결과 탄생하는 경제적 탈락 현상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금번에 소비쿠폰 주면서 기초, 가장 낮은 계층, 차상위계층이 전체 금액의 11.4%이고 나머지가 그 위 계층 그리고 전 국민에게 갔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이고.

이것은 제가 이 언론에 주입한 적도 없고 이 언론이 저에게 전달한 바도 없습니다. 경제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 아니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이 정부 여당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조직이 이번에 더 작게 탄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를 지적드립니다.

그다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 악화이다. 이번 추경은 20조 원 전액 빚을 내서 조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5조 원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의 마지노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

나라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비율 50%를 넘어갈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위기가 벌어지는지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이미 경험했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돈을 쓰면 지출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급하면 나라빚도 내야 되고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49%를 넘어서 50%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50%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뭐 하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는 빚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서 채권을 왕창 발행했었습니다. 그게 위기에서 저희를 구했습니다. 그런 채권은 발행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미래성장산업을 길러 내고 신성장동력을 길러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영역이 있고 저희가 국가채무를 100조 원 쓰면 나중에 1000조 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해야 됩니다. 즉 그런 것들을 골라내고 집행해 내서 선순환해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에 와서 봤더니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지출 사업이 그렇게 탄탄하고 생산적이냐? 확신할 수 없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계획의 거창한 얘기와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재정지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에 지원하고 동일하게 100억이 투자돼도, 동일하게 1000억이 투자돼도 그 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지출의 효과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재정지출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내서 일방적으로 문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 선배들이 아껴 온 재정지출의 여력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그런 준비를 해 나가면서, 다 하면서 우리는 국가부채를 내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소비쿠폰 뿌리는 건 쉽지 않

습니까? 돈 줘서 업체한테 뿌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쉽고 순식간에 쓰겠지요. 그러나 두 달이면 끝이고 두 달 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소비쿠폰 추경안 이 뉴스를 다뤘을 때쯤 행안위에서 이걸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선거도 이기셨고 다수당이시고 그래서 밀어붙이시니까 저희가 반대할 방법은 없는데 제가 대신에 딱 하나는 당부드리겠다. 이번에 20조 원 가까이를 소비쿠폰으로 쓰시는데 정말 경제적 효과만큼은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분석해서 가져다 주셔야 한다. 그 보고서는 20조 원짜리 보고서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라는 명분이 있었고 지금은 최악의 경기 악화라는 명분이 있었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명분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수십조 원씩 쓰게 되면 그거야말로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프랑스의 복지지출은 이렇게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뿌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고용보조수당, 무슨 명목들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나름 머리를 쓴 거지요. 뭐에 살짝살짝 보조를 해 주면 어떻게 더 촉진이 될까 이런 설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결국 양이 많으니까 지금 부채 폭탄이 터지면서 프랑스가 저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얻어야 되는 건…… 돈을 무조건 쓰지 말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만 쓰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해 본 국가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돈 쓰는 건 쉽지요.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중심의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기업들은 명운을 걸지 않습니까? 투자금은 반드시 가치를 만들어 내서 투자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에게 재원이 가야 되고 그 민간기업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결과에서 부가 창출되고 거래가 탄생하고 마진이 생기면서 저희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으로 뭘 합니까?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공공서비스 치안, 국방, 행정, 사법 그리고 취약계층을 돕는 일 그리고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SOC, 국방 이런 게 재정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차피 보수정당에 속한 보수적인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소비쿠폰 뿌려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됐는데, 저도 정당 소속인데 이런 것 왜 자꾸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게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밑에 살랑살랑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계속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거다, 세수결손도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만 갖고도 제가 10시간 다시 토론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슨 재주로 세금을 더 만들고 더 적게 만들고 합니까? 법인세를 깎아서 세금이 덜 들어온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입니다. 25% 중에 2%인가 1%예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중심 세목이 아닙니다. 저희가 걷는 재정의 기본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겁니다. 이런 중심 세목들이 잘 걷혀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의 이윤과 거래, 급여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에 달려 있습니다. 즉 경기 상황에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이 많이 걷혔던 것은 세율을 높여서 세수 기반을 잘 갖췄다? 그거

는 노무현 정부 때서부터 올라왔던 궤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그 궤적은 문재인 정부가 탁 만들어 낸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올라온 인프라가 축적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세청 과세 인프라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때부터 탈루가 줄어들었고 누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계속 올라온 겁니다.

조세부담률이 올라오는 게 좋은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게 소득분배가 좋아진다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좋다고 하면 균형이 또 깨집니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너무 급해지면 부담을 느낍니다, 경제활동이. 부자라서 무조건 중과세를 때려야 한다, 그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그렇게 돼서 계속 실패하는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세계관과 인식 속에서 기획예산처를 탄생시키면 불을 보듯 뻔히 재정을 더 쓰는, 작은 부처를 만들어서 재정을 더 쓰는 그런 식으로 갈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재정을 더 써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을 수 있다면 그거를 누가 반대합니까? 쓰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부담할 여력이 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를 부담할 여력은 무한정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정 아닙니다. 지금 좀 여력이 있다는 거지 이 여력을 소진하고 나면 큰 위기에 빠집니다. 더 이상,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한도가 있는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은 깊은 토론을 필요로 하고 굉장히 연속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처 탄생하는 데 그 어떤 토론도 없이 한 달 만에 몰아가시는 거고.

제가 윤석열 정부랑 다시 숫자로 좀 안내해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세 꼭지—여가부 폐지,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딱 이거 가지고 넉 달 걸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열세 꼭지입니다.

저 PPT 다시 보여 주시지요.

이렇게 여기저기 굉장히 다양하고 심도 있게 조직을 바꿉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딱 열흘입니다, 열흘. 상임위 토론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무제한토론을 안 합니까?

제가 경제지에서 쓰고 있는 다른 사설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4.5일제 요구하며 파업 예고한 억대 금융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조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어제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사 측이 월 기본급 9만 5000원 인상 외에 성과급 400% 더하기 1400만 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대신 작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최장 64세까지 소득공백 없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근무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나선 건 노조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 영향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현대차 노조뿐 아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그제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임금 인상 요구뿐 아니라 미국 조선시장 진출을 위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 철수설이 나오는 한국GM 노조도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일부터 어

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파업 행렬에는 금융노조까지 합류할 태세이다. 금융노조는 94.98%의 찬성률을 토대로 26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임금 5% 인상에 더하여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특히 주 4.5일제와 관련 장시간 노동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요구를 가급적 많이 들어주는 것 당연히 좋습니다. 그게 선진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업은 1만 명이 하면 1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창업가는 자기와 가족의 인생을 걸고 창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유인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경제관료 하면서 절대 배울 수 없었던 진실입니다. 제가 민간에서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신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업가의 손끝에서 커 온 기업이 결국 우리들을 채용해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근로자도 중산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합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항상 싸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티격태격하는 문제를 제도로 풀다가 아무래도 사용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글 자본주의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노조라는 것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의 권한을 인정하자, 대한민국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 산업화를 하면서부터 노동기본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는 노동자의 권력이 약했고 협상력이 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땀 한 땀 노동법이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기계적으로 누적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공세의 명분으로 삼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양곡관리법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미시는 걸 보고 이것은 정말 깊은 토론이 필요하겠구나, 서로 정말 많이 다르게 살아왔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대했는데 지금 토론보다는 여야는 강 대 강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 이렇게라도 토론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게 참 슬프게도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현장의 규칙에 대해서 과감히 바꾸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고 반대하는데 통과시키셨고 현대차·HD현대중공업 노조, 금융노조, 언론이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지는 모르지만 현대차는 정말 오랜만에 파업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하고 HD현대미포면 지금 조선산업 호황 속에서 잘 나가야 될 곳들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노조까지 합류할 태세라고 하니……

그리고 여기에 주 4.5일제, 주 4.5일제 좋습니다. 좋은데 준비가 됐는지, 이게 혹시 산업현장의 노동계와의 규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생긴 요구인지, 이런 것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노조가 소속되어 있으며 노조원 중 상당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5대 은행의 경우 지난해 일인당 평균 급여가 약 1억 1490만 원이었고 올 상반기 급여는 6350만 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복지 혜택은 국내 최고 수준이어서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이런 사람들이 저출생 극복을 내세우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파업을 벌인다면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있겠나’.

저는 저출산 극복만 되면 4.5일제가 아니라 3.5일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자인데 저희가 모든 일에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고 시간적 여력이 있다고 보이는—저도 진실은 모릅니다—그런 쪽에서 4.5일제를 들고 갑자기 파업 예고를 하니 이런 논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노란봉투법 통과시킨 이후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의 유인이 꺾이고 세금이 덜 걷히면, 진짜로 세금이 덜 걷히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또 재정을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재정에 빚을 낼 부담 여력이 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한된 여력이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쓰는 것은 철저히 우선순위를 통해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기분에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비쿠폰 같은 거 다 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탄생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드리겠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계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 있는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 4.5일제는 낮은 생산성, 정년 연장은 청년일자리 문제 때문에 당장 그리고 일률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이 또 일방 추진된다면 우리 산업경쟁력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늑대소년처럼 항상 걱정하는 쪽은 걱정하고 항상 요청하는 쪽은 요청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이제 0%대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보시고 그 앞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시고 이명박·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저하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그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그때 재정을 수백조 원을 썼는데 그러면 경제가 활활 살아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성장률이 좋아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강화시킨 세금 인프라가 문재인 정부 때 세수 증가로 나타난 거고 거기에 부동산 경기 폭등이 겹쳐서 양도세도 더 걷혔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돈을 많이 썼으면 윤석열 정부는 자동으로 경제가 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세를 반전 못 시킨 것이지 윤석열 정부가 낮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숙제도 이 구조적인 저하 추세를 어떻게 고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재정으로 무조건 안 됩니다. 재정을 어디다 어떻게 투자해서 하느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의 의욕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 인재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없는 나라입니다. 기업 하기 쉽지 않은 나라이고 이제 노동권은 특징적으로 특정 노조에게 잘 보호되고 있고 아직 많

은 노동자들이 다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본이 민간의 사업가와 결합해서, 민간의 노동자와 결합해서 수출을 해내고 부를 키워서 세금을 내는 게 기본입니다. 그 추세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어떤 정부든. 이제 공이 넘어갔으니까 만들어 내십시오. 세금만 많이 낸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면 지구상에서 못 할 나라도 없고 안 할 나라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왜 저렇게 나라가 파탄 지경이 났습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정교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보이지 않고 기획예산처를 아주 작게 만들어 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걱정을 안 하면 비정상인 겁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논점이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세까지 살기 때문에, 70세가 아니라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수명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70세 아니면 75세까지도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년만 법적으로 64세, 65세까지 늘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이미 법적 정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쪽에서 부분적으로 4년 정도 늘어날 뿐입니다. 전체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75세까지 일하는 사회 비전, ‘비전 75’ 저는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지금 현재는 50대 초중반에 은퇴하고 그다음 직업을 찾아가는 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하게 하고 어디에 부족한지도 알리고 그것을 또 준비하게 하고 또 그 이후의 연금재정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기획예산처가 아니라 경제기획원 같은 것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법적으로 정년만 연장한다? 그것은 일부 노조 가입자들, 일부 직장인에게 혜택이 가겠지요.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나 거기에 들어가서 경험 쌓고 일해야 되는 젊은층한테 귀결이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반대를 드렸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제 부처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경제 개편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용도 제출된 바가 없다, 토론도 잘 못했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하신 건데 이게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실무적으로 한 일이고 내년에는 기획예산처가 하겠네요.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 엄청 많습니다. 전년 대비 54조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도 110조 원이 늡니다. 국가채무 110조 원 느는 것은, 저는 그것을 논의하기 전에 이 728조의 지출이 설명 가능하냐, 선순환 가능하냐, 재정이 규모만 있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시대냐? 이제 그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지출은 규모를 유지해서 성장률의 숫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재정지출의 품질·내용·타당성·효과성이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랜만에 국회를 통해서 공직 복귀해 보니까, 작년 예결위에서 봤는데 지출이 최근에 급증했습니다. 몇백조, 한 삼사백억, 300억, 300조 원 정도, 총지출이 600조 원까지 급증했었는데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시대였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듣습니다.

코로나든 뭐든 좋은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선순환으로 돌아오느냐? 그때 그렇게 썼는데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는 왜 돌아오느냐? 자영업자들 빚의 굴레는 왜 남아 있느냐?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그때 재정지출을 많이 했고 국가부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신속히 그 늘어난 부분은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들의 빚의 굴레도 없었습니다. 돈을 손실보전지원금으로 직접 줬고 그것이 연장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왜 그런 설계를 안 했습니까? 왜 못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소비쿠폰 하신다 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빚 탕감한다 그랬을 때는 제가 그래도 이것은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몇 군데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극심한 경기 부진에 있는 것은 첫 번째,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전 세계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장벽을 쌓기 때문에 수출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 수출이 안 좋은 때문이고 그리고 수출이 좋아도 수출기업들이 국내에 투자 안 하기 시작하는 경향성이 몇 년 전부터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줄어서 노령화된 분들이 소비를 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줄어든 소비도 오프라인으로 이동했고, 이런 구조적인 논리의 궤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검증하면서 고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돈만 쓴다고 내수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내수가 살아났으면 코로나 때 썼든 언제 썼든 그 쓴 만큼 살아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늘었는데 그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단단하지 않고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갑자기 했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모르겠고 돈을 써서, 700조 원 아니라 7000조 원을 써서 더 큰 백배 천배의 효과가 온다면 그것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 어느 것도 없고 소비쿠폰 뿌리셨고 이번에도 예산안 들고 와서 예결위에서 또 검토하겠지만 지출은 관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부족한 세출은 관례적으로 국채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러면 그 여력을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할 것인지 그것은 이재명 정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책임과 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런 내년도 예산서를, 2026년도 기획재정부에서 낸 예산서인데 이런 것도 많이 좀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뭘 한다 뭘 한다 홍보성 멘트들은 많은데, 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 갖고는 전체의 모습과 그 내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우선순위가 잘 안 보입니다.

정부 예산서도 이제 고쳐서 투명하게, 우리가 어떤 규모로 늘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줄었고 어디는 늘었고 이렇게 좀 투명하게 가야 매듭이 풀리지 이렇게 해 갖고는, 이게 무슨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계속 지출은 관행적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한 110조 원 찍고 대충 이런 경향성이 아예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향성이 굳어지면 이 경향성 속에서 내수는 살아납니까? 성장률은 이

제 복원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저희는 둥둥 떠서 맨날 이렇게 검토하고 도장 찍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을 제가 얘기한 대로 더 투명하게, 더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돈 쓰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획예산처를 탄생시킨다고 하면 제가 왜 반대할 것이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세입세출 기능을 분리해야 되고 권한이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분산한다. 그게 국가채무 늘려서 지금 내수경제가 살아나는지, 국민경제가 살아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의드릴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위 아니면 예결위 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부조직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도 아니고 정파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여야가 교체해 가면서 지휘하는 공공의 조직입니다. 그 조직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편 갈라서, 어떤 쪽이든 저떤 쪽이든 편 가르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그 조직들의 기능 발전, 업무 발전, 그런 지향점과 처방 없이 조직을 여기저기 갖다 붙였다 뜯었다, 저는 이것은 동의할 수도 없고 저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고 선진국 돼서 지금 총지출이 700조까지 된 것 이것 정말 경이적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매년 국가부채가 100조 원씩 늘어나고 있고 차관까지 하면 매년 한 300조, 한 200조 정도는 국채를 새로 찍어야 될 겁니다. 옛날에 왔던 것을 차환해야 되니까, 만기가 돌아온 것을 연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GDP의 한 50%를 깔고 가는 것인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과감히 국가채무를 써서 총지출을 폭등시켜서 가셨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계속 물으면 '코로나 때였다' 이 얘기만 하고 마는데, 좋다니까요. 코로나 때니까 더 많이 쓰셨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이 썼으면 지금 무슨 효과가 있냐는 것을 저는 묻는 겁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모두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 등등 얘기하셨고 어제 이 필리버스터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께서 '윤석열 정부가 성장률이 1%대고 제일 낮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났으면 윤석열 정부가 왜 그렇게 낮은 성장률에 있습니까? 경제는 구조적인 거고 추세적인 겁니다.

외환위기 극복하면서 저희가 그때 마이너스 갔다가 경제성장률 확 뛰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지그재그 하면서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줄고 저희가 신산업을 개척하는 성장 추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에 갈 수는 없을 것이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 사이즈가 커지면 적정한 성장률, 예를 들어서 2%, 3% 이런 것들을 지속가능하게 꾸준히 유지하는 패턴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 이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2%, 3% 성장하는 자체도 큰 것이고 그 큰 사이즈 내에서 내역 조정이 더욱 질 좋은 성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하락하는 추세선 속에서 저희의 성장을 더 질 좋게 만든다, 이런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고 정부조직을 통해서든 예산을 통해서든 처방한 적이 있느냐? 저는 1년간 국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을 막고 추세 반전을 시키면서 정부 재정지출의 관행적 지출을 끊고 이 지출을 아껴서 국가채무를 줄여서, 아

니면 국가채무를 쓰더라도 더 선순환시켜서 더 큰 재정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논의되고 포함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련 상임위에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같이 토론하고 직접 토론했는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밤새워서 무제한토론을 드리겠습니까?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대통령 권력도 가져가셨고 1당이시고 한데 또 그렇게까지 프레임을 씌우시는가. 상임위 토론 한 번 없었고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꼭지 세 꼭지에 넉 달 걸렸고 이재명 정부 열세 꼭지 지금 열흘 만에 통과시키십니다. 토론 한 번 없이 밀어붙이시고 정부 예산서의 문제,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 논의가 없으십니다.

제가 소개드릴 부분을 놓친 게 있나 좀 보겠습니다.

그럭저럭 대부분 드린 것 같고.

한 가지 빠진 게, 이번에 가장 예민하게 추진되는 부분 중 하나가 기후에너지부입니다. 이 점은 조금 더 에너지와 기후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와 산자부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두 개입니다. 산업중소벤처위원회, 산중위와 환노위 두 개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연석해서 토론하든지 아니면 각각 토론해서 결과를 취합하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에너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얘기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듯이 우리 생활의 기본 비용이고 산업의 기본 비용이고 해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기본이고 그런데 이런 기본점 쪽에서 출발한 것이 화석에너지 위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기후변화가 왔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탄소제로 에너지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합니다. 아니, 뭐 탄소 배출이 많아서 기후가 변해서 인류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구가 힘들어하는데 저희가 조정할 부분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화석 의존도를 줄이고 전환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환의 과정이 의욕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정치한 준비와 계산 그리고 연구개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탄소 의존도를 줄이는 최적의 조합은 신재생과 수소와 원자력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쩌다 보니 이게 정치 개입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원전…… 원자력이냐 신재생이냐,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후에너지부를 탄생시킨다면 최소한 원자력과 신재생이 대척점이 아니라 서로 컬래버를 해야 되는 클린에너지 조합군이다 이 정도 지향성은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향성 속에서 현실 가능한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 현실 불가능한 과도한 신재생은 에너지 비용을 높입니다. 계통의 비용을 높이고 최종 공급의 비용을 높입니다. 그거 높아지지 않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잘 늘리면 좋지요. 바람과 햇볕으로 되는 태양광과 풍력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에너지 자립에 가까운 문제라서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미 국방부 같은 경우도 군수용으로 여기저기 분산 에너지로 가장 적합

한 것으로 또 신재생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분산형으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계산 그리고 계산이 저희 개인 개인의 계산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계산인데 이 계산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런 대립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이런 토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더욱 섬뜩하게 저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국에서도 기후에너지부가 있었고 실패했고, 2008년에 시작했다가. 독일에서도 뒤늦게 기후에너지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실패했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제조업 약화로 이어졌고 그래서 다 에너지안보부로 전환을 했고.

그런데 혹시 만약 저희가 그냥 '기후에너지부'라는 이 멋진 이름 때문에 또 에너지에 대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규제 부처와 공급 부처를 묶는 이 모순의 조합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조합이 탄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되는데 그걸 시도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것을 점검하고자 했고 토론은 없었고 열흘 만에 통과시키시는 거고 저희는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 자원개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또 그대로 두셨어요. 자원개발이 에너지도 있고 산업에 쓰이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원전수출 기능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고 했는데 원전수출담당과 정도 남아 있어 봐야 산자부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고.

결국 환경부가 에너지믹스 전력기본계획에 개입할 수 있고 최종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권한을, 기능을 가져가신 건데 당연히 신재생을 늘리실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가능하냐, 그리고 원전이 받쳐 주지 않으면 신재생도 성립되기 어려운 게 기술적 현실인데 그런 것은 논의된 것이냐, 그래서 EU도 지금 택소노미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잘된 것이냐, 저희는 이런 점들이 상임위에서 짚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짚어졌습니다. 열흘 만에 일방 통과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해서 무제한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평등부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아직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양성평등가족부'로 쓰지 않고 '성평등가족부'로 쓰셨습니다. 다양한 성을 존중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런 뜻이라면 그걸 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리슬쩍 정부조직법에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진입을 해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젠더 갈등이 한국에 더욱더 촉발되는 것 아닌지.

대한민국은 제가 한두 시간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치적 갈등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갈등을 줄이는 것이 YS 대통령의 문민정부 탄생, DJ 정부 대통령의 외환위기 극복만큼 중요하다고 정치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내부의 문제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외부의 문제까지 수입하는 것인지.

요즘 SNS로 묶여서 전 세계 정치활동들이 다 연동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 고칠 수도 없고 정부조직법이 당연히 그 해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갈등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시작점은 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합의와 정부조직법에 대한 합의가 논의된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산이 깨졌고 저희는 강 대 강 대치 속에 아직 있습니다.

저도 5공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젠더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감수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갈등의 총량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제한토론을 분명히 사과와 반성으로 시작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반성하고 저희 보수는 재건의 길을 묵묵히 걷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수의 좌초가 정부 여당에게 무제한의 백지수표를 준 것은 아닙니다. 도깨비방망이를 드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기능, 국가 재정, 금융감독 뭐 대단한 것들도 얘기했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이 젠더 갈등이 더 예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철은 되지 못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그래서 폐지되는 것까지 공약화됐던 것이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평등부로 바꾼다? 저희 당 내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갈등의 전선이 하나 더 추가되고 있다. 저희는 야당으로서 견제하고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기후에너지부, 성평등부 이런 부분은 감성적이고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인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유럽에 가 보시면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합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 기후적인 특성도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냉난방이 철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비싼 탓이다,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 비용이 비싸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하는 이런 속에서 살아온 유럽이 그런 실천적 노력 속에서 어떤 지점에 이르렀는가? 기후에너지부를 다 지금 포기하고 독일도 경제안보에너지부로, 영국도 경제안보에너지부로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고생해서 나온 시행착오를 갖다 써야지, 혹시 저희가 그 시행착오로 들어가자? 이것을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무슨 무슨 이유가 있다는데 저희가 들어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열세 꼭지를 이렇게 바꾸는 데 딱 10일입니다. 하루에 한 꼭지씩 공청회 해도 13일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검찰개혁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의 세부 논점들은 상당히 디테일하고 방대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말 반대 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반대 안 합니다. 분리하면 해야지요. 역사적 경험이 그렇고 사법적, 저희가 정치의 사법화를 끊어 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소와 사법을 분리하면서 탄생한 문제들이 있다, 저는 그것을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했고 보완조치를 들고 왔냐고 여쭸고, '없다. 1년 후에 보완하겠다. 시행 시간이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벌어질 일은 뭔지 저는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정보를 모았고 설명 다 드렸고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1년도 아니고 저희가 집중해서 토론하면 한두 달, 몇 달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토론이 안

돼도, 그러면 일방 통과하셔도 명분이 되는데 갑자기 들고 와서 열흘 만에 무조건 한다? 국민의힘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정부조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에게,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를 제가 설명하면서 미국 일론 머스크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감한, 다양한 성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이 펼쳐졌고 거기서 일론 머스크의 자녀 중 한 명이 성전환수술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났고 그래서 자기 재산 수천억 털어서 진보에서 보수로 정치적 지지를 바꿨다 이렇게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난 5공 세대라서 성 젠더 갈등에 대한 감수성이 제가 높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거나 젊은 분들을 보면 이건 굉장히 첨예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미안하게도 저희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통합보다는 갈등을 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갈등이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될지,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노력을 충실히 해서 뭔가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젠더 갈등을 추가할 여지가 있다……

(「그게 이준석하고 국힘이 한 거잖아요. 말 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은 지적 주십시오. 좋은 지적 주십시오. 누가 했든 갈등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들으세요, 좀. 어떻게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 듣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몇 선이나 된 사람이 들을 생각 안 하고 말이야, 회의 진행 방해하고. 지금 안 그래도 밤새 예민한 사안인데」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또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해도 성평등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속도를 좀 늘려야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견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성평등가족부가 바로 그 지점이고 기후에너지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직도를 평가한 걸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반복해서 보여 드리는 그림인데 이것은 제가 저희 당 내에서 광범한 토론을 거쳤다든지 아니면 지도부와 조율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제 헌법기관 양심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다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금번에 가져오신 정부조직 개편안이 총 한 13개 정도 되는데 잘하신 게 있으세요. 이렇게 급히 열흘 만에 통과시키시지만 제가 합의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만든다, 이건 뭐 그렇게 반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 말은 계속 드립니다. 통계는 데이터지만 데이터는 통계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용어에 혼선이 있을까 봐 제가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 요즘 우리가 중시하는 데이터는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 통신 데이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인데 통계청이 그걸 다루는 조직은 아니고 그것까지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그것까지 기획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언어의 혼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하지만 국가데이터처,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괜찮다, 이건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허청 밑에 지식재산처 만드는 것, 이것도 합격입니다. 크게 반대할 여지가 없어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로 만든다, 이건 당연히 찬성해야지요. 예전에 부총리였고 그동안 장관급이 아니었던 게 문제였고 오히려 빨리 격상시켜야 되는데 만시지탄, 잘하셨어요. 동의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차관을 신설하시고 안전본부를 격상하시는데 잘하셨어요. 저건 저렇게 할 만한 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차관을 격상시켜서 종합적으로 봐야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처벌 위주로 다뤄서 현실이 왜곡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 기대를 조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차관이 탄생하는데 누가 반대할 것이며 왜 반대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탄생하는데 이것은 찬성할 만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문제는 차관이 아니라 뭐를 탄생시켜서라도 풀어낼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취약한 부분이고 정말 어려운 전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해야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기보다는 전담 차관이 그 밑에서 하나 다룬다, 저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찬성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과기부총리 승격,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저는 제 헌법적 양심을 걸고 이런 것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을 왜 상임위 토론 한 번 안 거치시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민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예산, 에너지들을 쏙 빼 갔기 때문에 보나마나 전력기본계획을 조정해서 신재생을 늘리는데 그것 자체도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재생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와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으로 목표해야 되는 것은 화석을 줄이는 것이고 그 화석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원자력이고 그리고 그런 역할 속에서 늘어나야 되는 건 신재생입니다. 이런 순서와 조합이 잘 갈 것인지,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가적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논의하고 합의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토론할 장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낙제라고는 하지 않았고 채점 거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 논의하고 방향성 합의하면 향후에 정책 펼치는 데 더 편한 건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계셔서 제가 또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지만 이진숙 위원장과 일하시는 게 불편하고 조기에 정무직을 통치 철학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든 헌법은 정치 구조 속에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창의적으로 조직을 바꿔서 한다, 저희

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정황을 모르니까. 정보도 없고 그것 외에는 저희가 추론할 개연성도 없습니다.

그런 거라면 이것은 안 좋은 겁니다. 헌법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은 퇴장을 말씀드리고……

(장내 소란)

말씀 주세요. 제가 잘 듣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13년 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미래창조부로 왜곡된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고민해 가지고 제가 국회 들어오자마자 이 법 발의를 쭉 준비해 왔고 과기부하고 논의해 왔어요. 1년을 또 준비했어요.)

○의장 우원식 여기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박수민 의원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들어 주신다잖아요.)

○의장 우원식 아니, 여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상임위에서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선 의원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행동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여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 봐야 국민에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무제한토론하는, 반대토론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수민 의원 감사합니다. 짧게나마 최민희 의원님 주신 말씀은 제가 들었고 그 부분 제가 또 성찰하고 살피겠습니다. 어떤 연혁이 있으셨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하셨던 문제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열흘 만에 통과시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세 꼭지 가지고 넉 달 걸렸습니다. 지금 열세 꼭지 가지고 열흘 하십니다. 이런 토론이 불거지는 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전개입니다. 주신 말씀은 제가 추가로 분석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퇴장이라고 설명드린 거고 추가로 살피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자세히 가야 되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 말씀드렸고요. 성평등가족부도 언급드렸고, 산업안전보건 차관 하는 것 이것 합격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지만 토론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토론드리는 것은 산업안전차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챙기면서 현장의 문제를 더 했다면 지금 중대재해법을 검토하고 더 센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하는 이런 기능이, 이런 과정이 저는 순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처벌 위주의 법으로 해결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하게 시행되고 있고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지만 풍선효과는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들리고 있고 법으로, 처벌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법에 처벌만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적된 현장의 문제가 있고 다양한 현장의 문제가 있고 그걸 촘촘히 바꿔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전담 차관을 만든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이 차관이 탄생해서 전시적으로 더 처벌적인 법을 만들고 기존에 처벌이 너무 강해서 문제됐던 점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일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를 제가 찬성드리지만 조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뿌리기 때문에 두 달 지나면 효과가 없다. 행안부에서 소비쿠폰 추진하셔서 이걸 왜 하냐라고 거듭거듭 제가 여쭸는데 경기가 최악이라 경기를 살려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하시기 때문에 이걸 도와야 한다, 이 두 개를 선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비쿠폰을 뿌리면 경기는 두 달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비쿠폰 전 국민에게 뿌리면 취약한 분들한테는 덜 갑니다. 잘되는 데 더 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소비의 생리이고 사람의 생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퓰리즘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상공인차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문제를 역사적으로 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확 늘어난 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1998년도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그때 저희가 가슴 아픈 구조조정을 하고 그 이후로 수출 산업은 이를 악물고 가꾸어 냈지만 많은 일자리들이 일시적으로 없어졌고 그분들이 내수에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많이 뛰어드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만만치 않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좀 늘어났었기 때문에, 잘 늘어 왔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기대실 만한 내수의 풀이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 초반 혹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교차하는 그 정도 시점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나이 많으면 돈을 덜 씁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내수의 풀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문제가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오래 구조화된 문제입니다.

동시에 수출이 잘되면 내수가 잘되는, 수출과 내수의 트리클다운이 어느 순간 선명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수출산업이 성숙 상태로 들어갔거나 혹은 투자를 미국이나 인도나 글로벌리(globally)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발전해서 글로벌리 투자하는 것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경쟁력을 그렇게 쌓아 나가야 수출 전선을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투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해서 해외투자를 하는 만큼 해외투자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해외 여행 관광을 많이 가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면 내수가 줄지요. 그러면 해외 관광객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산업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국내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본격화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수 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중간에 사업도 했

는데 죽 회고해 봤을 때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잡았던 부동산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 수도권에서 등등 주택을 잘 공급하는 설계를 하면서 그때 전문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전문임대사업자라는 그 법제 틀로 들어와서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세원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전문임대사업자로 크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설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설계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설계였는데 그 괜찮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설계조차 저희는 그동안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도곡동에 공무원 아파트인가 재건축한 게 있었는데 도곡동 렉슬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주택인데 재건축하고 몇십억짜리, 그때 한 20억인가 그런 아파트들이 탄생했는데 그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고.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커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남 재건축에 대한 당연한 선망도 있고 당연한 경계심도 생긴 겁니다.

그런데 주택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은 원하는 곳이 아닌 외곽에 개발하고 이런 미스매치가 반복되면서 집값이 안정되지 못했을뿐더러 주택산업이, 부동산산업이 안정감 있게 지속가능하게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GDP 통계를 찾아보면 건설산업 부진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저는 건설경기로 내수를 부양하자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안정,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중의 주는 안정이 돼야 직장도 다니고 애도 낳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요 억제한다, 공급 확대한다 이 온탕 냉탕 속에서 널을 뛰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영끌 투자까지 나서고 그러니 부동산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꺼지고 나면 내수에도 이렇게 또 빈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내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산업 자체를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 공급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안정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수에서 기반이 나오고 그다음은 우리가 해외투자를 하는 만큼 해외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해야 되고 그런 투자가 신산업, 벤처산업으로 가서 새로운 수출산업이 탄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부,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해야 되는,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국가경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국가경영의 기본 노선을 충실히 따라오지 못했고 지속가능하지 못했고 그 한가운데에 정치적 격변이 있습니다. 수평적 정권교체는 하는데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잘한 일은 계승되지 못하고 전 정부의 잘못한 일만 공격되고,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사유 중의 하나로 공직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경제정책이나 국가의 정책 중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차별점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점을 제시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인 문제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할 일은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되게 하지 않은

결과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 저성장과 내수 부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귀결이 된 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십니다. 부족한 내수의 풀에서 또 온라인으로 많은 손님들이 이동하셨고 그 제한된 오프라인 풀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저희는 이걸 다루지 못했고 이번에 이걸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제라면 소상공인 전담 지원 차관 이건 당연히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 보면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과기부 부총리 승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차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이건 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합격. 그래서 제가 합격 한 겁니다.

제가 아까 경제부처 설명드렸는데 이제 소상공인, 부동산 문제도 했으니까 경제 문제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가 역대로 변해 온 그 표도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시 보여 주시지요.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개발연대를 이끌어 왔고요. 경제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발전해 가면서 자유화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경제기획이라는 저 기능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경제관료 선배들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져서 재정경제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적인 비극적인 일이 겹칩니다. 김영삼 정부 재정경제원 시절인데요 저 때 또 하나 저 표에는 없지만 탄생했던 조직이 있는데 정보통신부입니다, 정보통신부. 그래서 경제기획원의 기획 주도 경제는 접었고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지만 IT만은 국가 주도로 발전시킨다 하는 스몰, 작은 버전의 경제기획원이 정보통신부로 탄생했고 이게 대한민국 IT 강국의 초석을 열었습니다. 정말 좋은 판단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 경제기획원의 시대를 제가 칭찬하는 거는 원래 경제라는 게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캐치업 할 때는 국가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게 독일이고 그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산업혁명을 한 영국조차도 영란전쟁을 벌여서 해상무역을 항해령으로 독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관세협상보다 더 심각한 거지요. 템스강 하구를 찍고 가지 않으면 유통을 못 한다 이런 강제령이고 그런 강제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서 영국이 산업화를 했고 그걸 더 정밀하게 배워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독일, 더 잘 배워서 성공한 나라 일본 그리고 그 나라 일본을 배워서 다시, 미국도 배워서 다시 더 좋게 발전시켜서 경제성장을 한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그 밑그림은 경제기획원이 다뤘고 경제기획원은 밑그림을 그리는 데니까 세제·금융, 여기는 직접 자금을 다루는 데기 때문에 재무부로 뺐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성공 신화를 썼는데 노태우 정부 때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민간 중심의 경제로 움직인다, 저희는 그때 판단을 딱 하고 재정경제원으로 통합을 해서 경제기획 기능을 축소시켰고 그러나 정보통신부라는 국가 주도의 섹터 영역은 다시 끌어가고 그렇게 잘했던 겁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이고 김대중 정부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라기보다 김영삼 정부 말기지」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터지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해결하셨다 그런 말씀이시

지요?

그때 외환위기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 출범하는데 그때 재정경제원을 공룡 재정경제원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 경제적인 배경지식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얼마나 전파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사실은 산업화를 겪은 나라들이 다 겪은 경제위기입니다. 한 번 산업화가 성장하면 거기에서 공장 부실이 형성되면서 은행의 위기까지 번집니다. 외환위기까지 번집니다. 그런 일들이 1800년대, 190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다 있었습니다. 그게 다 대공황이고 다 영국 런던의 공황이고 경제공황들이 다 있었습니다.

동아시아가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에도 그 현상이 찾아왔던 것인데 처음 겪으면 그걸 파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비참한 일을 저희가 겪었고, 그런데 저희가 기적적인 일을 해낸 겁니다. 그걸 다시 극복해 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제가 이건 선배들에게 들은 몇 가지 비사이기도 한데 재정경제원이 공룡이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했더니 연말에 예결위에서 장관 출석을 꼭 해야 되는데 동시에 외환위기 협상도 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양해를 안 해 줘서 굉장히 시간 제약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기능을 쪼개자, 예산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다시 만들자 해서 기획예산처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 금융위기가 터졌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체계가 있고 저때 제가 기획예산처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저게 다시 통합이 됩니다. 저는 그때 기획예산처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게 통합되는 게 꼭 옳은지 틀린지 그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었는데 지나고 나오는 객관적인 평가는 기획예산처는 너무 작다, 예산만 갖고 하나의 부처를 돌리기에는 좀 작다, 비전 2030 등등 멋진 일도 해냈지만 기능적으로 조금 절름발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경제기획원을 너무 축소시켜 놓은 거지요.

재정경제부는 어땠느냐, 좋은데 예산이라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경제 조정이 안 된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다시 합쳐서 기획재정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이 여전히 재정경제부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재경부에 가고 감독은 금감위에 있고 이러니까 금융권의 불만이 아주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혼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의 금융기능을 떼서 금융위원회로 통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옛날 체제로 회귀하시는 겁니다. 그 회귀의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기획예산처 탄생은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재위에서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마 그 추억 때문인지, 저는 그렇게 추론하는데, 글쎄 그게 조직까지 쪼갤 일이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획예산처가 다시 탄생해도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때 기획예산처가 작아서 문제였는데 이번에 더 작게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때 작아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더 작게 탄생하면 뭐가 좋아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듣

지 못했고 기재위에서 어떤 토론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당연히 국가부채를 동원해서 소비쿠폰을 뿌린 정부 여당이 재정을 더 쉽게 컨트롤 하려는 의도이다, 더 작게 만들어서 정치권이 더 쉽게 쥐락펴락하기 위한 이유이다, 저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기능조차도 복원되지 않은 낙제점, 과락입니다. 낙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틀린 게 있어요.)

말씀 주십시오, 계속.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그 원인을 소비쿠폰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 틀린 거예요, 일단.)

소비쿠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수는 두 달만 살리고 취약하신 분들은 저희 예상만큼 도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제가 행안부장관님께 소비쿠폰 할 때 어차피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추진하시니까 반대도 못 하고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효과분석은 객관적으로 해 달라, 딱 하나만 말씀드렸고. 소비쿠폰 뿌리셨지만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0%대로 나올 예상으로 이미 한국은행과 KDI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다시 만들면 예전에 예산이 없어서 조정 기능이 없다, 부처는 큰데 권한이 작다, 실질 역할을 못 한다, 경제 수장 역할을 못 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거에 그 문제를 다 내세워서 기획재정부 체제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유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야지요. 그런데 예산 기능이 없어서 실질 조정 이런 게 잘 안 됐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는 정말로 금융정책 기능이 재경부에 가 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쪼개져 있어서 문제가 돼서 금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걸 또 그대로 다시 쪼개는데 이게 무슨…… 그런데 국제금융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있고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 위주로 돼 있어서 합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국제금융을 오히려 가져와야지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국제금융 하는 금융위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옛날처럼 국내금융을 다시 가져가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든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에 성공하지 못한 모델을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다른 좋은 대안도 있는데, 국제금융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가져오면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다시 복귀한다? 이거는 낙제입니다. 이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융조직법에는 다행히 올라오지 않고 정무위 사안이라서 잠복한 이슈라서 직접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잠복한 문제, 금융감독원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 순서가 저기에 그림으로 잘 나옵니다. 금융산업 중에서 은행산업이 당연히 제일 먼저 발전했지요. 그래서 한국은행 산하에 은행감독원이 있었고 그다음 증권산업이 발전하면서 증권감독원이 탄생했고 그다음 신용관리기금, 소상공인 등등이지요. 그리고 보험감독원 이런 기구가 발전했고. 이렇게 다기관 체제였는데 외환위기 때 금융에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게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은감원·증감원·보험감독원, 저희는 쉽게 한 줄로 설명하지만 업계를 감독하는 정점의 기관들, 갑 중의 갑 아닙니까. 저런 기관

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도 겹치고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 명분으로 시대적인 명분과 흐름 속에서 간신히 금융감독위원회가 탄생하고 벌써 몇 번의 정부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여섯 번의 정부에 걸쳐서 면면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금감원 직원들 자체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원 이런 영역의 부분들은 마지막 부분에 정부 여당이 스스로 철회를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흘 만에 밀어붙이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열세 꼭지 이상, 이것은 소폭의 정부조직 개편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고 눈으로 보시듯이 이 정도면…… 아까 그 조직도 좀 다시 띄워 주시지요. 한눈에 직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부분 개편도 아닙니다. 거의 전면 개편 급에 가까운 중대형 대폭 개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열흘 만에 하자고 하십니까?

저는 당초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특검 연장과 확대의 실익보다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에 무게를 뒀던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서 더 이해가 됐습니다. 당초에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셨구나, 이게 간단한 개편들이 아닌데…… 사실 특검은 3대 슈퍼 특검이 다 출범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 더 연장된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타결의 시도를 했었구나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작은 개편이 전혀 아니고 무려 13건의 에너지, 사법, 경제, 예산, 금융…… 정말 이것은 중폭 이상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봐야 되고 당연히 한두 달의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정무위, 기재위 간의 연석회의도 필요하고 환노위, 산중위 간의 연석회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찬성한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과기부총리, 고용노동부차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신설 이런 것도 상임위 토론은 다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토론을 거쳐서 나쁠 일이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열흘 만에 하시자니 동의드려서도 안 되고 동의할 수도 없고, 저희의 방법은 알리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로 알려서 '아, 여기에 이렇게 예민한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이것을 알려야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좀 감이 오셨으면 합니다. 기대를 해 봅니다. 이게 단순히 발목 잡기인지,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이제는 최소한 같은 배경지식 속에서 얘기를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경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세계관 속에서 각자의 얘기를 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모여서 저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이 첫 번째,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아예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중요한 거니까.

(「박수민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라 제가 조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친절하십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비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제가 진짜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오늘은 사실 그렇게 오래 할 각오는 아니었는데 어느새 밤은 샜고 시간은 꽤 흘렀는데, 제가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새워 말씀드린 목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혹시 이런 게 있을까 찾아보니까 3대 국정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청과 통합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면 민주당이 듣지 않고 민주당이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듣지 않고 나라가 잘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거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가 3년 남았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통령도 탄생해서 이제 대통령도 5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정 상황은 서로의 얘기를 듣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3대 특검법 연장을 축소하면서 정부조직법을 합의 논의하는 그 자리에 제가 우연히 있었는데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속는 것 같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당황스러웠는데, 어쨌거나 양심과 소신의 소리를 듣고 '그래, 저렇게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된다' 해서 제가 저희 대표님과 수석님께 많이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배경지식이 다르면, 세계관이 다르면 합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배경지식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합의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배경지식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제 견해에 대해서 그래서 밤새워 말씀드립니다. 경청과 통합이라는 이 국정원칙이 실현되기를 응원드리고 기대합니다.

여기 세부적으로는 또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야말로 현대 정치의 핵심 원리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속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에 기반하여 결속을 이루는 것이 통합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속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기반으로, 각자 자율적이고 다양하지만 상호 의존적, 공동체가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속을 이루는 것이 통합이다. 획일이 아니다. 자율적이고 다양하지만 함께 결속을 이루는 것이 통합이다. 진짜 이것만 해도 대한민국 발전합니다. 국민들 스트레스 훅 꺼지십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입니다. 통합을 위한 정치 실현입니다. 국정과제 속의 활자로 끝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을 이렇게 토론 없이 열흘 만에 간다? 통합과는 상극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파행이 되든지 아

니면 밤새워서라도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단 후자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새워 설명해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만 딱 뽑아서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편하신 얘기도 많겠지만 잘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15시간 전 정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정권을 잃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어 가야 할 국정의 과제, 개혁과제들이 있었는데 이어 가지 못해서 죄송하다, 가장 직접적인 계엄의 원인을 예단치 못했고 또 계엄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된 혼란을 관리해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일련의 연속 과정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말씀이 잘 전달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찰의 결과는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 제가 실천해야 할 소명은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견제 그리고 대안이라는 소명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을 잘 걷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5시간 정도 지금 견제와 대안의 시간을 좀 걸어 보았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수목불치, 수단과 목적이 잘 일치되지 않는다. 세입세출을 분리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한다는 것과 무슨 연계가 되느냐? 그리고 기후에너지부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대한민국 산업 생산력을 지키면서 탄소 전환을 해내는 것이냐? 방향성은 대충 보이는데 그게 그 수단과 연계가 되느냐? 잘 모르겠다. 성평등가족부는 대한민국에 성평등을 가져오고 가족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성평등이라는 해외의 사회적 갈등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해 내는 진입처가 될 것이냐? 대한민국 가족과 양성평등, 헌법이 정한 양성평등의 그 목적을 달성해 낼 수 있느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이 불일치한다, 수목불치.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평가드렸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동의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이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된다.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미 불거진 수사기관 간의 핑퐁 문제가 있다. 수사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시중에 파다하다. 그리고 통계로 이미 잡히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1년간 준비하겠다, 준비기간 동안 준비하겠다, 그 답만 들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목적은 알겠는데 수단은 검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작업장 하나를 폐쇄하는 것을 넘어선다. 2300명의 검사와 1만 1000명의 전국의 수사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선신구폐, 새집을 짓기 전에 옛집을 폐하지 마라. 2300명의 검사와 1만 1000명의 수사관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1년 시행기간 동안 가늠해 보시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년 후에, 아니 이미 폐지가 결정됐고 1년 후에 중수청·공소청으로 갈리는 2300명의 검사와 1만 1000명의 수사관은 성심을 다해서 그 1년 동안 수사에 매진하겠느냐, 사법에 봉사하겠느냐? 조직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으면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빠이고……

저는 검사들의 심적 방황, 수사관들의 방황 그 속에서 당연히 구직활동이 늘어날 것이

고,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개혁을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없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한 핑퐁의 문제를, 이 조직 설계의 문제를 투명하게 몇 달 토론하면 되는데, 짧게라도 압축적으로 토론하면 되는데 그러한 토론을 하지 않고 조직부터 없애고 간판부터 달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수단과 목적이 정합성을 가지고 의도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것은 수사 핑퐁과 1년간의 거대한 사법 혼란이 느껴집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요즘 정리하고 있는 경구는 '보수는 수구로 망하고 진보는 급진으로 망한다'입니다. 저희 보수는 조금 더 시대 방향 속으로 개혁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개인 모두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 의원님들은 높은 식견과 개혁적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체로서 우리는 아직 자신 있게 저희가 더 선제적이고 개혁적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변신하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는 그 자신감 속에서 급진 실험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할 뿐이고 그 혼란의 책임은 역사와 국민들에게 갑니다. 해서 제가 주마급류, 말을 타고 물을 보고 있다. 그런데 또 꼭 그렇게 하실 이유는 무엇이냐? 한두 달 토론하시면 의석수가 달라지나? 한두 달 토론하시면 대통령이 바뀝니까? 있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가.

숫자로 거듭 비교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은 3개 부처 그리고 넉 달 걸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13건인데 열흘 만에 밀어붙이십니다.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담백하고 가장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3건을 넉 달 만에, 13건을 열흘 만에,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런 점은 꼭 좀 비교를 해 주십시오. 여야 관계가 워낙 강 대 강 대치이고 서로 워낙 자극적인 발언들이 많아서 놓칠 수 있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발목 잡기가 될 수 없다는 점, 저는 우선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밤새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것을 논리가 없는 일방적인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보고 그 논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대신 제가 돌아보고 그 논리를 발전시킬 시간은 저에게 또한 주셔야 합니다. 그냥 통과시킬 일이 아닙니다.

보수는 수구로 망하고 진보는 급진으로 망한다, 저는 아예 저 스스로는 외우고 다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13건이라는 꼭지 숫자뿐 아니라 경제부처 전체 개편, 산자부와 환경부의 융복합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예민한 단어의 출현, 검찰청 완전 폐지와 중수청과 공소청의 탄생 그리고 그 검찰청에는 2300명의 검사와 1만 1000명의 수사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2만 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또한 연결된 일이라는 점,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627건의 관련 법률과 조항들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는 점,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맡은 저조차 그 627건의 부칙 변경을, 무려 이삼백 페이지에 이르는 그것을 일일이 보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리라고 보고 이것

은 다시 토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토론이 안 된다면 최소한 무제한토론을 통해서라도 국민들께 논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해 주셔야 하는 점은 경제부처를 전면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로 넘어가고 성평등부라는 첨예한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방통위가 이름만 바꿔서 폐지되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쫓겨나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상임위에서 토론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부처가 전면 개편되는데 기재위 토론이 없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는데 산중위의 토론은 없었고 기후에너지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환노위의 토론도 없고 성평등부에 대한 여가위 토론도 없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족에 대한 과방위 토론도 없었고 법사위에서는 무슨 토론을 좀 하기는 했다지만 언론인들이 더 잘 아시지만 요즘 법사위 상황이 제대로 된 토론이 용이한 상황은 아니다 하는 점, 이런 점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면서 계속 설명드렸던 점은 우리는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토론만 열렸으면, 나 같으면 즉각적으로 5건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만드는 것,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만드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하는 것,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것,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것, 이러한 일은 반대할 리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저 상임위에서 토론 한번 하면 여야가 아름답게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는 부여되지 않았다.

저는 이런 배경에 지금 양극화된, 갈등이 격화된 정치권의 심각한 지형이 있고 동시에 그 지형 너머 분열된 국민들이 있다. 그리고 그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하자는 말은 하지만 실제 그 국민들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단초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통합의 단초를 가시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얼마 전 여야 합의 파기에서 쉽게 잘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압수수색도 받았고 탄압도 받고 있고 보복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슈퍼특검인데 그 슈퍼특검이 한 달 연장된들 사실 그게 저희한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수십 명의 검사를 파견해서 더 이상 파견할 검사 찾기도 어려울 텐데 검사 숫자 좀 늘린다고 그게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혹이 남는 것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나라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힌다 하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면 통합의 미래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커진 갈등의 골과 통합의 부담은 당연히 저희에게도 오겠지만 먼저 정부 여당에 갑니다.

역대 정부를 거쳐서 심화되어 온 정치 갈등을 생각할 때, 지난 1년간 제가 경험한 정치 갈등의 양상을 생각할 때…… 한 정치학 석학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분열과 정치 갈등을 끝내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열어서 하나회를 척결했던 역사적인 소명, DJ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에 나라를 수습했던 점, 그런 역사적인 소명과 대등한 무게이다. 제가 밤새워서 한 두 차례 정도 소개한 석학의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깊은 갈등의 함정, 분열의 골짜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양한 칼럼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세력 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 SNS 알고리즘을 통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NS 알고리즘은 이성이 없는 객체적인 전산 코드일 수 있지만 선거를 놓고 끝없이 경쟁해야 되는 저희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그 경쟁을 현명하게 이끌지 못하고 계속 갈등의 깊이로 빠져든다면 저희는 알고리즘의 이용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의장 우원식 박수민 의원님,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셨는데요 소개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양 의원실 소개로 경남 창원 자여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침 일찍이 오셨는데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님이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서 좀 이상하지요? 어제부터 이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제한토론은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무제한으로 토론하겠다는 제안이 있으면 그것은 무제한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의원들은 순번을 정해서 자기 조에 참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자리에 많이 없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수민 의원이 어제 오후 6시 29분부터 지금까지 15시간 27분을 계속 지금 토론하고 있어서 힘들지만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 오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박수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오시니까 제가 밤새워 해서 조금 컨디션이 낮아지다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게 제가 해 보니까 진짜 미래세대에 대한 기대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인데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민 의원님,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

지금 대체로 몇 학년 정도 오셨나요?

(「5·6학년」 하는 의원 있음)

5·6학년? 5학년·6학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좀, 다둥이 아빠인데 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비슷한 또래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실 아이가 많기는 한데 저희 아이들 고3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습니다. 재미있게 키우고 있는데 사실 진로 지도는 잘 안 해요. 저는 5 대 5 원칙을 꼭 얘기합니

다, 아이들한테.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귓등으로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듣겠지 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오늘 5 대 5 원칙을 한번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5 대 5 원칙이 뭐냐 하면, 이 아저씨가 세상을 살아 보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5000년 전의 사람이나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생각하는 방식, 습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잘 안 바뀐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사람의 특성은 잘 안 바뀐다. 아마 유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안 바뀐다.

그래서 5 대 5 원칙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나 윗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혀 듣지 말지도 말고 다 듣지도 말고 반만 들어라. 왜냐? 왜 반만 듣느냐? 반은 맞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게 가고, 공자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세종대왕님 말씀이나 이순신 장군님 말씀이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선생님 말씀이나 비슷합니다, 부모님 말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반 정도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절대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좀 다운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껏 아무도 걸어 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가 젊은 분들을 뵈니까 갱년기 증세가 좀 나오네요.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숨 고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누구도 걸어 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 누구한테 묻지 마십시오. 부모님 얘기 절반 듣고 선생님 얘기도 절반만 듣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채우십시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몇 가지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5 대 5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 좀 웃깁니다. 저희 집 가훈이 '더 좋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민주주의 잘하시는 분은 여기에 가득해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아저씨가 좀 나은 것 같고 아저씨의 유전적인 DNA가 조금 전달이 됐다면 우리 집안도 그런 쪽에 좀 특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더 좋은 자본주의 가능하다면 해 봐라. 그런데 이 얘기를 해 봤자 어차피 제 얘기는 반밖에 안 듣습니다. 반은 제 아이들이 채울 겁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국회라는 곳이 결국 대한민국의 나랏일을 상의하는 곳인데 그 결정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처럼 미래를 살 사람들에게 좋은 게 뭐냐. 저희가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밤새워서 토론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5 대 5 원칙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채워 보십시오.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토론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점은……

아까 그 조직도를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5개의 합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지. 국민의힘 전체랑 제가 상의한 바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즉각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5개의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면도 있겠지만 어차피 총체적으로 열흘밖에 시간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열흘 내에 토론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저희 국민의힘도 찬성할 게 즉각적으로 5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알린 바가 있습니까?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해서 밤새워 필리버스터만 한다는 얘기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언제 정치가 좋아지고 언제 정부조직이 좋아지겠습니까?

일단 5개를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는 나머지 것들은 토론을 좀 하십시오. 제가 토론을 1년 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밤새워 얘기한 거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그렇게 급하면 한 달 토론하고 필요하면 한 달 더 하자, 그리고 안 되면 일방 통과시켜라. 그러면 명분이라도 생기고 상호 이해라도 높아지지 않느냐.

배경지식이 다른 사람,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외운 사람,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외운 사람, 두 사람이 색깔을 같이 얘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배경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합의를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지 꼭지별로 나는 어떤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어떤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과정이 생략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밤새워서 얘기합니다.

자, 다섯 가지가 즉각적으로 합의가 되는데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 좀 심각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진보진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아닙니다. 지금은 경제부처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 하고 검찰개혁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를 분리해서 기획예산처를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세입세출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국가가 걷는 세금 같은 것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쓰니까. 세출은 국가가 쓰는 돈입니다. 이게 수입지출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모릅니다. 국가회계는 좀 폼 나게 별도의 용어를 쓰는데 세입세출이라고 씁니다. 사실 세입세출이 같이 있어도 되고 찢어져도 되는데 최근에 세입세출이 같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너무 크고 그래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하는 것이 민주당, 정부 여당의 논리이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게 논리구조라면, 세입세출을 분리하는 게 논리구조라면 이런 식으로 탄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을 분리해서 달성할 목적을 논의해야 됩니다. 세입은 세입답게 더 좋아져야 되고 세출은 세출답게 더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세출 기능이 좋아지려면 기획 기능이 강해야 됩니다. 숫자 계산만 한다고 지출의 성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출을 잘하려면…… 오늘 우리 미래세대도 오셨으니까 미래시대의 지출이, 여러분들이 아낀 저축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써야 될지 미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사전답사도 해야 됩니다.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으면 상점도 미리 가 봐야 하고 모델도 체크해야 되고 댓글도 살펴야 되

고 주변의 품평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전준비 작업이 탄탄해야 합니다. 국가에게 그 기능은 기획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분리한다면 옛날의 경제기획원 같은 조직이 다시 탄생해야 합니다.

경제부처 변천표를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가 세출을 떼어서 기획예산처로 보냅니다. 이 세출을 잘하려면 기획 기능부터 잘돼야 되는데 간판만 기획예산처라고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 기획예산처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획예산처가 작아서 기획 기능이 잘 안 되고 기획계산처 된다고 저희끼리 자조했었습니다. 예산은 정책이고 예산은 지출의 효과성인데 기획 기능이 약하니까 기획예산처가 아니라 기획계산처다, 우리 스스로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기획예산처를 만드시면서 그 기획 기능을 보강하나? 나름 옛날 추억도 있고 해서 제가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웬걸, 거꾸로 갔습니다. 기획 기능이 탄탄하고 발전적이어야 기획계산처가 되지 않고 기획예산처가 될 수 있는데 옛날 기획예산처의 기획 기능보다도 작았습니다.

옛날 기획예산처보다 작은 기획 기능을 가지고 기획예산처가 돼라 이렇게 정부조직안을 탁 던지신 거예요. 기획예산처에 근무했던 저는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본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좀 여쭤보십시오. 기획예산처 근무했던 사람 수백 명인데 저한테만 체크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처가 컸는지 작았는지, 기획 기능이 충분했었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때 국가비전 2030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데 정말 제한된 인원으로 죽을 둥 살 둥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작은 기획예산처를 만든다? 이게 어떤 논리 구조입니까? 이걸 우리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최근 정부 여당의 행동과 세계관과 연결해서 저희는 연속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장 비판했고 가장 경계하고 앞으로도 지적할 부분은 소비쿠폰 같은 포퓰리즘입니다. 빚을 동원한 포퓰리즘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저도 알지만 저는 그걸 더 정치하게 오늘 밤새워서 설명드렸습니다.

국가 빚을 늘린다고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된다. 과학적으로 봐서 대한민국은 빚을 늘릴 여력은 좀 있다. 그게 다 선배 세대의 노력 덕분이다. 그런데 그게 무한하지 않다. 제한된, 언젠가는 제한될 채무의 여력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아까 제가 승수도 설명드리고 인프라의 재정투자 효과도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곳에 쓰면 생산적인 효과를 냅니다. 소비적인 곳에 쓰면 소비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소모적으로 쓰면 소모됩니다.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숙명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중요하고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조 원을 써서 1000조 원을 벌 수 있는 미래의 투자처는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돈이 있어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나라 전체를 담보로 걸고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 왔고 산업은행이 빌려 온 돈을 모태로 해서 시중은행이 재형저축을 끌어들이고 그 돈을 강제저축으로 배분

해서 그것이 포항제철을 만들고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내고 삼성전자까지 커 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산적인 것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고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번영을 이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소비쿠폰을 뿌리는 것, 특히 선거기간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것, 이건 안 되는 일이고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처를 작게 만드는 것이 혹시 이런 정치권의 입맛에 맞춘 포퓰리즘 등장의 길을 여는 것 아니냐, 저희는 보수적으로 다각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 내년에 110조 원 정도 늘리겠다고 다시 재정지출을 줬는데 그 빚의 크기보다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작년에 예결위에서 부처별 정부지출들을 많이 살펴봤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예산들을 보았습니다. 예산을 몇백억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써 낸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생산적으로 써야 되고 알뜰하게 써야 되고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던 대한민국 재정지출의 규모가 어느 순간 급팽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라고 합니다. 다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냐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수백조 원의 재정지출이 늘었는데, 좋습니다. 답변은 코로나 때문이라는데 좋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 때 썼으면 그것은 어떤 효과를 남겼는지는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 생산적인 곳에 써서 성공했으면 그다음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1%대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썼는데, 작년에 여기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내내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과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세청 IT 인프라에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루 세원을 줄였고 그때부터 세율을 높여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세율을 더 높였습니다. 그게 조화가 돼서 세금이 더 잘 걷힌 거고, 그때 부동산정책을 실수했는데 그게 부동산 폭등을 가져오면서 양도소득세 그런 게 더 걷힌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지식이 아니고 제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하십시오. 저도 수정하고 교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다면, 팩트가 맞다면 받아들이십시오. 받아서 정부 여당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획예산처를 더 작게 만드는 것에 몹시 불편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이 그렇고 제 근래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기획을 기획답게 해서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것인지, 그저 작은 기획예산처로 쉽게 쉽게 일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이 뚫어 내야 되는 경제 난관이 어디입니까? 무역 협상 아닙니까? 그리고 저성장 아닙니까? 그리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무역 협상을 잘하는 데 금번 정부조직 개편은 도움이 됩니까? 정부조직 개편 한 번 하면 저희는 법안 한 줄로 통과시키지만 조직도 바꾸고 과 이름 바꾸고 책걸상 바꾸고 또 과장 인사 해야 되고 사무관 인사 해야 되고 국장 인사 해야 되고, 제 생각에 짧아야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저희 관세 협상 느긋합니까? 3500억 불 문제없습니까? 3500억 불 금액 자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동맹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EU는 GDP의 6.9%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EU는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은 GDP 13% 정도 규모로 투자 협상을 끝내고 관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저희보다 엄청 많고 또한 엔화는 아직은 그래도 준기축통화적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기축통화적인 성격도 없고 외환보유고도 일본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해서 일본보다 훨씬 큰 규모, EU보다는 한 3배 정도, 일본보다도 거의 한 2배 되나요? 그런 정도의…… 숫자 좀 찾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천천히 찾으면서 발언 이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3500억 불 자체가 저희한테 상당히 무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패키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무역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안보동맹입니다. 안보적인 역할은 저희가 첨병에서 더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일본보다. 누구보다? EU보다. 더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안보적 동맹의 가치를 높이면서 경제 협상의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제가 협상장에 없었기 때문에 단언은 못 하지만 예단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잘 진행된 것인지, 안보의 밀착과 협상의 물꼬가 잘 조화되고 있는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질 것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13%, EU는 GDP 대비 6.9%, 한국은 GDP 대비 20% 3500억 불. 이것을 누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저는 이 숫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기업들이 모아서 내는 숫자인 줄 알았습니다. 한 10년간 민간기업들 다 모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외신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외환보유고 얘기도 나오고 통화스와프 얘기도 나오는 것 보니까 이것은 기업들이 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내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냅니까? 어떻게 이런 금액이 협상이 시작된 겁니까?

그리고 큰 틀에서 3500억 불 등등 합의가 잘됐는데 세부적인 걸 협상하고 있고 그게 뭐 일희일비 안 한다 등등 많은 얘기 나오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지구상에서 3500억 불을 세부내역 없이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집행의 방법, 수익의 배분, 재원의 조달 방식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3500억 불 협상이 지구상에 어디서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정부를 계속 공박해 봐야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을 호기롭게 산업통상자원부도 바꾸시고, 에너지실이니까 통상 쪽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고, 협상을 진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분리하시고 외교부는 그대로 있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런 조직 재편에 부담을 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 그래서 드리는 게 제가 만든 대안입니다.

경제부처 조직도 다시 보여 주십시오.

저기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최근의 후배 관료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출을 떼서 기획 기능을 강화하면서 분리한다면 이제 과거의 기획예산처보다 더 작은 기획예산처 말고 경제기획원급을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경제기획원이 바로 비저블 핸드 국가 자본주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설계해 온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비저블 핸드의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시대는 최근 무역질서에서 잘 없습니다. 인비저블 핸드는 인비저블 핸드로, 비저블 핸드는 비저블 핸드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이 붙어 있어서 뭐가 불편했다 이런 작은 생각을 버리시고 편협한 관점을 버리고 관세협상과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될 진로를 보고 그 속에서 차라리 비저블 핸드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러면 동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을 만들어서 대미 협상의 전략, 무역질서의 전략을 짜고 큰 기능들을 해 나간다면 저는 예전처럼 금융은 다시 합쳐서 재무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재무부는 외환위기 관치금융의 멍에를 받아서 그렇지 기능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융 조직, 금융정책국·증권국 다 괜찮았습니다. 관치적인 마인드에서 시장적인 마인드로 전환하는 게 힘들었을 뿐이지 조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안도 드렸고 절차적인 시간도 합리적으로 제안드렸습니다. 모두 다 생략되고 열흘 만에 진행됐다, 밤샘 토론 안 드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경제부처에서 이번에…… 어제 낮에 갑자기 철회하셔서 뺐지만 그림이 나온 김에 금융감독 집행 기능, 같이 설명해야 합니다. 은행·증권·보험, 3대 정통 금융영역으로 발전해 온 것이 대한민국 금융산업 역사고 그 역사가 저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먼저 탄생했고 60년대, 증권감독원이 70년대 그리고 보험감독원이 90년대에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영역들을 잘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저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했습니다. 이유는 외환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사일로처럼 하나씩 있지 않고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때 통합할 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각 감독원별로 아마 노조도 달랐던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등등등 업역 갈등, 조직 갈등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진통을 겪고 20년 넘게 금융감독원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냈다가 싹 사라지기는 했지만 저 금융감독원을 두 개로 쪼갠다는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쪼개냐?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호주에 성공모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호주에 있는 것 하나를 갖고 저희가 해야 될 그만한 저희의 상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주산 금융감독 기구를 사 온다면 그 호주산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의 모든 임직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자리를 줘야 하니까 기관을 쪼갠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부조직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분리 가능성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실물경제, 실물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진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삼

성전자, 현대·기아차 또 LG, CJ도 있지요. 정말 글로벌기업입니다, 최은석 의원님이 근무하셨던 CJ. 포스코. 이런 실물 기업들은 저희 세대 스스로 놀랄 정도로 정말 글로벌 톱 기업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CJ, 포스코, LG 이런 기업들의 위상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보셔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산업입니다.

단적인 비교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실물 기업은 글로벌입니다. 대한민국 금융 기업은 내수입니다.

미래에셋이 인사이트 펀드 등등 해서 해외를 개척한 선두주자 역할을 했지만 외환위기에서 홍콩 데스크가 철수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금융은 계속 내부적 관점에서 발전했지 발전을 못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좀 뚫었지만 증권시장도 박스피, 박스피에 갇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융시장의 4대 천왕이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KB금융 NH금융 하나금융, 또 하나는 뭐지요? 하나 KB NH 우리, 이 4대 시중은행 그룹을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4대 천왕이다 뭐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역사적 괴리가 있냐 하면 저희가 산업의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반도체는 그런 게 있겠지요. 90나노 45나노 30나노 12나노 7나노 5나노 이렇게 첨단 노드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5나노 기업하고 90나노 기업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산업은 영국, 미국 등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금융산업은 처음에는 비제도권 사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사채업자가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제도권 금융이 클 수 없기 때문에 좀 지나면 은행이 발전합니다. 즉 대부업이 양성화되는 겁니다. 남의 예금을 받아서 굴려서 이자 장사하는 은행업이 공식화됩니다. 은행업 다음이 채권을 찍는 겁니다. 대출을 주고받고 예금을 받고 통장거래를 하다가 아예 내가 빌리는 돈을 증권 형태로 찍어 나가는 채권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다르지 않은 거는 빌려주는 겁니다. 담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담보만 갖고는 안 되니까 금융산업이 발전할 때 증권산업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어도 투자하는, 지분에 투자하는 증권산업 같은 게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권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통폐합, M&A를 발전시키는 IB 산업이 또 발전합니다. 이 IB에서 다양한 업종이 파생하는데 벤처캐피탈, 상장주식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PEF 이런 특화 업종들이 발전해 나갑니다. 이게 규칙은 아닌데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4대 천왕인 KB·우리 이런 데 머물렀다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은행 시대에 살아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증권사 잘하고 계십니다. 자산운용사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가 몇 대 천왕이라는 얘기 저 못 들어봤습니다. 증권사가 몇 대 천왕이라는 얘기 못 들어 봤습니다. 즉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몇 대 천왕에 들어가는 반열은 은행업이다.

그러면 은행업의 전성기는 미국은 언제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2차 대전 전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 이론 같은 것이 발달했고 그 속에서 증권업이 탄생했고 폭발했고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이 막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벤처캐피탈이 없는 것도 아니고 IB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산운용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아직 은행을 4대 천왕으로 부를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즉 내수에 머물고 있다. 이 일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저는 저희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겪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국제금융시장과 연동이 됐는데 이게 물건 만드는 거와 금융 다루는 게 좀 섭리도 다르고 생리도 다르고 갑자기 외국인과 섞여서 갑자기 잘한다, 쉽지도 않았고 또 어떤 선진 금융회사들이 너무 독주돼 있었습니다. 저희도 골드만삭스 이런 거 이름 다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다 따라잡고는 있지만 어려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아직 덜 발달했습니다.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금감원을 금소원으로 또 분리를 하고, 이게 저희가 얘기한 사분오열인데 이게 여기에 도움이 될까요? 이 자연적인 진화체계의 발전이 될까요? 저는 연결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토론해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발전 궤적을 볼 때도 금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재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도 드렸습니다. 제 대안이 완벽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토론의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의 출발점이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토론의 끝에 제시된 문제점은 반드시 치유의 단초를 확보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검찰개혁을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정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시려는 시도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에 도전하시느냐'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은 국민들과 토론된 것이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부는 규제부처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지키는 규제부처입니다. 산자부에서 쏙 빼 가시는 에너지실은 공급부처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온. 특히 전력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전력공급을 발전시켜 온 공급기관입니다. 규제부처에 공급을 더하면, 흡수시키면 당연히 공급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편리한 비교점이 있습니다. 2008년 영국이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설치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력가격이 높아졌고 전력 도매가격이 폭등했고 약해져 가는 영국의 제조업 기반이 더욱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력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지요. 더울 때 추울 때 다 필요하고 주방에서 취사할 때 심지어는 잠잘 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도 냉장고는 자면 안 됩니다. 병원은 24시간 전기가 필요하고 이 생활을 넘어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주체 중 하나는 제조업체입니다. 이런 곳에 전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토론이 없었습니다. 열흘 만에 통과시키시고 계십니다.

제가 소속 정당이 달라서 탈원전을 뭐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탈원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해서 햇볕과 바람으로만 전기를 조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달체계가, 햇볕과 바람으로만 조달하는 체계가 전기료

가 2배, 3배라면 그것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후에너지부는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부가 탄생한 이후에 우리의 전력요금은 어떤 궤적을 그려 갈 것인지 그것은 전력기본계획을 그려 가면서 대충의 목적점을 정해 놓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토론이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기 때문에 밤새워서 얘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알리지 않으면 괜히 새 정부 발목 잡는다고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유가 뭔지를 설명드리지 않으면 오해를 벗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했느냐? 전깃값이 오르고 제조업 기반이 손실됐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를 바꿉니다. 2023년에 에너지안보 중심 부처로 개편을 합니다. 기후에너지부에서 기후에너지안보부로 바꾼 것입니다. 에너지가 흔들리니까 국가안보 자체가 흔들린 겁니다.

제가 어차피 보수정당 소속이라 좀 이렇게 딱딱한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과 팩트는 다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독일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에 매진했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독일입니다. 탈원전도 선언했었고 신재생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했습니다. 러-우 전쟁 포함해서 지정학적 위협까지 겹쳤던 것 같은데 하여튼 2년 만에 다시 환경부와 경제에너지부로 분리해서 재출발합니다. 그사이에 에너지 비용은 높아졌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독일은 러-우 전쟁까지 거쳐서 지금 에너지 사정이 난리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탈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런 대척점이 아닙니다. 인류는 깨끗한 에너지로 가야 합니다. 즉 그것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혹은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 그것은 바람, 햇볕 그리고 원자력입니다. 저희가 탄소 때문에 줄여야 하는 것은 석유, 석탄, 가스 이런 탄소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지구상에서 아직도 80%는 탄소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에 취약하고 이것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려면 신재생과 원자력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원자력이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신재생입니다. 이 둘의 협업 속에서 원자력이 기반을 채워 주고 신재생이 차분히 발전량을 쌓아 갈 때 대한민국은 실수하지 않고 신재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더 잘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탈원전을 하다가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를 늘리기 위해서 북새통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정을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제 귀에 이것이 들어왔다면, 저는 그때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동료들을 통해서 들은 건데, 과거에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건데 저는 사실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의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후에너지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전력의 배합은 어떤 정도로 생각해 가고 있고 그것은 어떤 전기료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가 국민들과 최소한의 토

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떠한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무제한토론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제가 50대다 보니까 젠더 문제나 이런 데에 사실은 그렇게 감수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해 봤더니 이것은 기후에너지부나 기획예산처 탄생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대한민국에 수입할 수 있는 단초입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투명하게 토론돼야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36조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즉 양성평등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번에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로 바꿉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을 촉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혹시 다양한 성의 평등을 촉진하실 겁니까?

미국에서 남성, 여성, 중성 이런 분류가 엄청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생생한 사례가 일론 머스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성전환수술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낸 사회 분위기와 정책에 배반감을 느껴서 일론 머스크는 진보정당 지지에서 보수정당 지지로 돌아서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로 정치활동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쳐 보면 다 나와 있는 일론 머스크의 공개된 고백입니다. 이만큼 성평등은 미국에서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SNS를 통해서 보수, 진보, 모든 정치활동이 전 세계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소수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개혁적인 보수당이 제 목표이고 소수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정도의 보수 철학이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다른 차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정치적 갈등 속에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물이 찰랑거릴 때 한 방울만 추가돼도 물은 넘칩니다. 저희는 지금 추가적인 갈등을 초대할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의장 우원식 잠깐만요.

부산도서관 직원들이 오래간만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방청석에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민 의원 반갑습니다. 도서관에서 오셨군요.

○의장 우원식 계속하세요.

○박수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박수민 의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서관과 관련된 것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가는 것도 있고……

○의장 우원식 그것은 없어요.

○박수민 의원 없지요?

하여튼 정부조직 개편이 지금 13건이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열흘 만에 진행되고 국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는 게 저희 당의 판단이고 팩트입니다. 해서 이것을 국민들께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제가 조금 밤새워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평등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금일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 세 번 정도 소개시켜 드린 칼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학계의 석학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DJ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YS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만들어서 하나회를 정리했듯이 지금 시대의 대통령의 화제는 사회 갈등의 통합이다’, 대한민국 정치 갈등과 사회 분열을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지적에 150% 동의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등해서는 나라가 잘될 방법이 없습니다. 잘돼도 국민들이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를 할 이유도 없고 경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갈등부터 하나씩 토론하면서 간격을 좁혀 나가고 싸울 땐 싸워도 할 일은 해 나가고 이런 실천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잘 못 해서, 정부조직 개편안도 토론 한 번 못 하고 해서 지금 무제한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스리슬쩍 만든다? 시대적·역사적 과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그냥 통과시키겠습니까?

금번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가 촉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많이 아시는 것입니다. 3대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연장하는데 그걸 좀 축소하고 대신에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자, 이런 여야 간의 첫 번째 합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듯이 지금 여야는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고 첫 번째 여야 합의라 가슴도 뛰기도 하고 이것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실직고를 하건대 이미 출범한 특검은 슈퍼 특검입니다. 막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해 본들 저희는 수색당할 것 다 당했습니다. 이미 웬만한 검찰청 크기의 검사들이 파견이 돼서 추가로 파견할, 증원할 검사도 많지 않을 겁니다. 즉 특검법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실익은, 그 피해는 저희도 별로 없습니다. 500대 맞은 사람이 2대 더 맞는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그런 것인데, 놀랍게도 여당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특검으로 어느 정도 충분하고…… 그런데 정부조직법, 정부조직 개편 이건 간단치가 않다, 이걸 합의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정부의, 정부 여당의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은 모호하고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조직은 간단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경제부처, 금융위원회, 환경부, 산자부, 특허청,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여가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검찰청 폐지.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당연히 이것을 논의하고 합의 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고 정부 여당은 정확히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 합의에 응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합의는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깨진 과정은, 이것도 언론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검 연장과 정부조직법을 바꾼다, 바꿔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여당, 민주당 측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야 1호 파기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즉 지금 여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의를 해 나간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국민적 갈등의 상황이고 분열의 상황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를 스리슬쩍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갈등의 도화선을 다시 하나 심는다? 철저한 검증과 토론이 필요하고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기 전에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년 내내 파행됐던 기관입니다. 5명의 위원을 채우기가 좀 싫으셨던지 민주당에서 2인 체제로 유지하셨고 또 그 2인 체제 속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까지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내막을 살펴보았습니다. 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유료방송 진흥 기능 뭐 가져오는데 그것 때문에 조직을 폐하고 조직을 새로 설치한다? 상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편해서 조직을 폐해서 사람을 쫓아낸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께서 그렇지 않은 역사적 히스토리 있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는 나태하지 않고 그 히스토리도 꼭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토론도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이상 판단할 능력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법을 잘 이해하는 법꾸라지, 헌법을 잘 활용하는 헌법꾸라지 이런 것은 헌법의 이름으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평가에서 '퇴장'이라고 쓴 겁니다.

자, 제가 이 정부조직에서 통계청 잘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 지식재산처로 잘 만드셨다 설명드렸고요. 과기정통부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 이것 정말 잘했습니다. 이공계 없이 대한민국이 오늘 어떻게 왔겠습니까. 부총리로, 예전에 부총리셨는데 다시 복원하는 것 당연하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신설, 중소벤처부차관 신설 다 동의드립니다.

산업안전을 차관급으로 해서 저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야 처벌 위주로 하지 않고 안전과 예방 위주로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어려움 문제도 복수 차관으로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것도 저는 동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경제부처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모델을 과거의 문제를 고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더 깊게 만들면서 시작한다고 관찰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서 만든 금융위원회인데 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만드는 것, 이것은 해외 사례를 보면 당연히 낙제점인데 제가 이걸 왜 채점 거부로 했느냐? 저는 신재생을 늘리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재생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높아지는 과정과 수순이 체계적이고 차분해야 그게 달성이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신재생부터 늘리면 또 계통에 물리지도 않고 낭비만 되고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재생을 늘려 갈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이냐? 화석을 줄이는 겁니다. 원자력을 보강해 가면서 신재생을 늘리고 그러면서 R&D를 더 열심히 해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틀렸다면 토론을 희망합니다. 토론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환노위에서 없었고 산중위에서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통위원회는 헌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반대를 드려서 퇴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라는 첨예한 사회적 논란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갈등 상황에서 시도할 만한 일이 아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커진다, 지금의 정치 갈등을 풀어내는 것만 해도 우리는 솔직히 못 하고 있다, 그게 오늘 무제한토론의 결과이다.

그런데 성평등이라는 예민한 단어를 토론도 없이 스리슬쩍 정부조직에 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여는 것이냐 저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고 남은 것은 검찰개혁인데 이 부분은 한번 차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순서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오늘 방청석에 권칠승 의원실 소개로 고려대학교 학생 23명이 오셨습니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방청과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수민 의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 그런데 뭐 제가 오늘 밤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첨예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진짜 첨예한 건데 이렇게 열흘 만에 간다는 것이, 상임위의 적절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 토론도 없이 간다는 것이 저 스스로 더욱 긴장감을 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진 것은 검찰개혁이지요?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든다 이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토론드리고 설명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또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 원칙부터 제가 먼저 천명을 합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에 찬성합니다. 누구도 시대의 개혁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역사적 과제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해야 되고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면 분리해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과의 많은 구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

라 결국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는 것인데 더 이상 기소·수사 집중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미 실수를 반복했다, 이번에 고치자, 기소·수사를 분리하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찰의 정치화를 끊고 정치의 검찰화를 끊는다면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 갈등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반대합니까. 찬성합니다. 검찰개혁을 찬성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핑퐁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상당히 일어났는데 그게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2021년, 2022년 그때 언저리니까 벌써 이삼 년 경험이 누적됐습니다. 그사이에 불거진 문제는 경찰과 검찰 간의 핑퐁 문제입니다.

이미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 좀 보여 주십시오.

제가 급히 찾아보니 신문 기사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그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보시듯이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검경 수사권 조정했던 그 타이밍 이후로 저렇게 늡니다. 평균 처리기간이 느는 겁니다.

저것의 문제가 뭐냐? 사건이 벌어지고, 사기·배임·횡령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수사해야 되면 사건이 벌어지고 기억이 생생할 때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살아 있는 기억 속에서 사건이 재구성돼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 기점을 아마 6개월로 잡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시고 통계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저렇게 저 기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저 숫자가 단순히 늘었다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시중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겁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수사가 지연된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 문제부터 법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면 언제까지 어떻게 기소를 해야 된다는 요청이 없습니다.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 보완수사를 경찰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완수사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경찰도 중요하고 검찰도 중요하고 서로 사건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지연되고 또 어떤 사건은 누락이 되고 어떤 사건은 왜곡되고 그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 통계가 보여 주는 함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찬성한다 그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빨리 분리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문제, 지금부터 벌어질 문제에 대한 추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된 숫자로 나온 이 문제, 시중에서 벌써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삼 년 된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검찰개혁 하고 수사·기소 분리하고 대신에 이 문제를 같이 고치자. 답은 없었고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보강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수사·기소는 더 분리합니다. 그러면 수사는 기관 간에 더 핑퐁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는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합리적인 추론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것이 더 늘어나는 것을 추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많이 늘어나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늘어난 문제만 고치는 것도 첨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고치고 토론하고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검찰개혁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신구폐, 이사 갈 집을 짓고 옛집을 허물어야 한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구조직을 없애야 한다, 이것은 조직을 개폐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왜냐? 1년 동안 혼란이 극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청 소속에 2300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1만 1000여 명의 수사관이 있으십니다. 검찰청은 금번 기점으로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소청으로 가는 겁니까,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결정이 됐는데 예전처럼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1년 동안,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검찰청에서 이분들이 성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해 보고 조직생활을 해 본 제 경험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일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1년간의 혼선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미뤄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집중적인 토론 몇 달이면 된다 그리고 그 토론 과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그때 해도 여당은 명분이 충분하다. 저는 아예 짧게 원 플러스 원, 한 달 더하기 한 달만 토론해도 대강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박수민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잠시 후 기사에서도 소개드릴 것입니다.

무한 핑퐁의 문제는 이미 발생해서 현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노력하실 겁니다. 검찰도 노력하실 겁니다. 그러나 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 핑퐁의 문제가 지금까지 저렇게 늘어 왔는데 앞으로 줄어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1년간의 사법 공백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결정이 되고 중수청·공소청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면 검사 2300명과 수사관 1만 1000명은 그때부터 자기의 진로를 향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성심을 다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이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검찰개혁을 해야 돼서, 그게 완성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힘없는 분을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힘없는 국민이 도움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공익대리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어떤 분들은 후견인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됐지만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을 지니신 분들 또 어떠한 건에 대해서 어떠한 기간 사이에 정

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후견인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 그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지정하고요.

그런데 가정법원에 '이분은 후견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누군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검사들이십니다. 검사들께서 '아, 이분은 후견인이 지정돼야 된다'라고 가정법원에 얘기를 해야 후견인을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지요, 중증 치매 환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친족들·가족들, 부모나 친족들이 나서서 후견을 하거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1인 가구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 검사이고 검사의 요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검사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이것을 없애는 겁니까, 유지하는 겁니까?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됐습니다. 논점이 잘 제시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후견인제도 현장에 있지 않고 가정법원에 근무 안 했었기 때문에 이런 후견인 제도가 어떤 정도의 양으로 어떤 정도의 건수로 진행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1건이라도 상당히 그분들에게 중요해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분들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그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조직 개편 한두 줄의 표현으로 이것을 바꿀 문제가 맞는지, 토론을 생략해도 되는지,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 특별사법경찰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공무원들이신데요. 이게 국세청, 관세청, 산림 그다음에 보건, 소방 이런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2만 명이 넘으십니다.

분야도 매우 다양한 게 세무·식품·보건·산림, 이런 특별사법경찰은 지금 현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수사지휘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 좋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정도는 제가 얘기한 한 달 정도의 토론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론이 생략되고 일주일 만에 밀어붙이십니다.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하실지 제가 밤새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부의 명칭이 검찰청이 중수청·공소청으로 바뀌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장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명칭이 포함돼 있는 다른 법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에서 찾아온 내용은 627건입니다. 부칙을 통해서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검찰총장으로 돼 있는 것을 공소청장으로 할지 중수청장으로 할지 이것은 성실히 정밀하게 다 판단된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돼 있는 것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할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할지 이것은 정리가 된 것입니까? 심도 있는 토론 거치지 못했습니다. 정밀한 분석,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토론과 분석 생략하고 밀어붙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광고 좀 하겠습니다.

○박수민 의원 예.

○부의장 이학영 지금 본회의장에는 방청객으로 송재봉 의원실 소개로 청주 대성초등학교 학생 97명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체험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의원 반갑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말씀하십시오.

○박수민 의원 예, 토론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토론이 생략됐다고 얘기하는데 숫자적으로 다시 결론을 비교해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정부조직을 바꾸는 데 3건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였습니다. 이 3건을 처리하는 데 얼마 걸렸느냐? 네 달 걸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대로 두기로 했고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설립은 통과시켰습니다. 3건 처리하는 데 넉 달 걸렸습니다.

금번에는 얼마 걸렸습니까? 금번에는 13개 꼭지입니다. 내용도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승격 등등을 넘어서는 첨예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도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10일입니다, 10일. 13건의 대형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법안을 추진하면서 달랑 열흘. 3건을 처리할 때 넉 달. 3건에 넉 달, 13건에 열흘. 13건에 열흘, 3건에 넉 달. 저는 산수로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13건 내에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만드는 거고, 저는 검수완박 해야 되고 검찰청 폐지한다면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파생되는 핑퐁의 문제 그리고 새 조직이 생기기 전에 구 조직을 폐지하면서 생기는 선신구폐의 이 원리를 거스르는 부작용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점만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대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형성이 돼야 합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가 됐다면 그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직접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수사권을 지휘하는 사건지휘권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지휘권의 표현이 지휘라는 상하관계를 의미해서 경찰분들의 명예심에 손상이 간다면 그것을 명예적인 표현으로 바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요청하고 날짜를 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율체계는 확실히 결정해야 핑퐁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 가능한 지휘체계와 예측 가능한 수사 조율의 체계가 성립된다면 1년 후에 뭐가 탄생할지 대충 미리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소청에 남을지 중수청으로 갈지 민간으로 갈지 그런 판단들이 더 선명해지고 조직에 신속하게 더 빨리 구성원들이 안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지휘권의 문제가 역사적으로는 이미 경험이 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검찰을 논의하지만 과거에는 자

유당 시대에는 경찰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국민 편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게 헌법인데 헌법이 저희에게,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는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검찰을 믿지 말고 경찰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대신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믿으라는 것이 헌법이 제게 준 임무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것은 견제와 균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권한이 경찰은 집중되고 검찰은 약화되고, 저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집중과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수사지휘권을 논의해 보면 어떻습니까? 수사지휘권이 생기면 분리되고도 지휘함으로 견제와 균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의 할 준비된 전문가는 이미 이 회의장 밖에 가득하십니다. 저를 뛰어넘고 저를 넘어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저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논의되어야 지금 폭등하고 있는 핑퐁 수사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아니, 이미 폭등한. 폭등하고 있는도 아니고 폭등할도 아니고 이미 폭등한 수사 지연의 문제를 고친다.

수사 지연의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가장 힘없는 백성한테 간다. 아니, 죄송합니다. 가장 힘없는 국민에게 간다. 힘없는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고 그 국회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실하게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제가 기억하고 제가 배운 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집중과 해체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기소·수사 분리를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 피해, 서민 피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보강 설계되어야 합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보강해라. 그것이 경찰의 자존심에, 명예를 손상하는 표현이라면 발전시켜라. 제가 뭐 작명가도 아니고 그것에 집착하겠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핑퐁의 방지, 핑퐁의 축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런 모호한 지점이 남아 있는데 2300명의 검사와 1만 1000명의 수사관은 진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냐, 1년 동안 차분히 잘할 것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손을 놨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많은 민생사건들, 사기·횡령·배임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촉발, 아니지요. 검찰이 촉발했다고만 볼 수도 없지요. 검찰과 정치권이 연계돼서 생긴 정치의 사법화 문제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문제, 이번에 끊어 내시자면 반드시 끊어 내시지요. 저는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 속에서 해서 국민께 피해가 없어야 되고 이것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는다,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당장 통과를 시도하실 것이며 밀어붙이시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 국민의힘이 세부 설계에서 합의를 못 한다? 그러면 그때 통과시켜도 됩니다. 더 당당하십니다. 그런데 토론은 생략하고 이렇게 가신다?

저는 추석 밥상에 검찰 폐지 선물을 올리겠다는 당의 정치적 발언 말고는 제약 요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국민들조차 문제가 없는 검찰청 폐지를 기다리지 문제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검찰청 폐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저는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도 믿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도 믿습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다 평균 이상의 수준과 능력을 가지신 국민들입니다.

저희가 짧은 한 줄로 대화하다 보니 '검찰청 폐지를 추석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대화들이 언론에 한줄뉴스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줄뉴스에 묶여서 2300명 검사의 진로와 1만 1000명 수사관의 진로를 1년 동안 공백에 빠뜨리고 이미 늘어난 핑퐁수사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법안부터 통과시킨다 그리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토론 과정조차도 단 10일이다, 제 상식과 양심을 걸고 반대토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도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오늘 토론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해 보니 금번에 조직개편 하시는 게 13꼭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3꼭지에 넉 달 걸렸는데 13꼭지 들고 오셨는데 열흘 만에 통과시켜 달라 한다, 토론 생략했다, 제가 이 문제는 다 지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개인적 양심과 헌법적 소신으로 저 스스로 판별해 본 겁니다. 헌법적 토론을 다 생략하셨기 때문에 뭘 찬성하고 뭘 반대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꼼꼼히 제 나름대로는 봤습니다. 괜찮은 게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 지식재산처로,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부총리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차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차관 신설, 저는 동의가 됩니다. 즉각 동의가 됩니다. 이런 거 합의 처리하면 됩니다.

제가 낙제라고 한 것, 채점 거부라고 한 것, 퇴장이라고 한 것 그것은 제가 지금 긴 시간 걸려 설명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은 반대가 아니라 빈틈이 많아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채우는 데 한 달이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 달을 못 기다려서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스리슬쩍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이 예민한 단어를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이래서 토론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됐다면 저처럼 젠더 이슈나 감성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까지 이렇게 검토했을 리도 없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잘 아는 이슈입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고친 게 아니라 더 깊게 만드는 잘못입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만드는 것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습니다. 신재생을 늘리는 거 좋습니다.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는 차분해야 되고 그것은 원자력과 협업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실책이고 경험이고 교훈입니다. 저보다 더 그 교훈을 잘 알아보실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판 달고 출범하겠다, 에너지실만 쏙 빼내 가서 집어넣겠다. 산업중소위원회도 정확히 토론하지 않았고 환경부도 정확히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새워 토론드린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부의장님, 의장단 여러분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긴 시간 제 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도 있었지만 저는 의원님들이 바뀔 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제 논리에 반박하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저는 열려 있겠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고생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 차례인데요, 잠시 이 근처에 계실 것 같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십시오.

- 무제한토론 의원(서영교)

(11시45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서영교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사위원 서영교입니다.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막을 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보석으로 나오겠다며 열 번도 넘게 내란재판에 안 나오더니 모양을 비쳤습니다.

윤석열은 참 안하무인입니다. 재판을 안 나와요. 어떻게 재판을 안 나오지요? 열 번이나 안 나와요. 그런데 열 번이나 재판에 안 나오는데, 윤석열이 재판에 안 나와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강제구인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검사가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갈 배짱 있는 국민 있습니까?

재판부가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윤석열은 도대체 뭡니까? 아직도 윤석열은 자기가 최고인지 아는 모양입니다. 감옥에서 영영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 무서운, 대한민국에서 그 무서운 내란을 일으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여의도로 왔습니다. 여의도로 왔습니다. 윤석열이 여의도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여의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자 세상에 있는 모든 국민이 여의도로 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빛의 혁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면에 나와 있는 빛의 혁명, 국민 여러분은 화면으로 못 보시니 제가 이렇게 손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빛의 혁명이 있고…… 이곳에 여러분, 많이 오셨지요? 너무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추워도 너무 추운데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왔습니다. 여의도에 그렇게 많은 국민이 모인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외쳤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외쳤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이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일으킨,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3일 이곳에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를 이쪽에서 하지 않고 당사로 바꿨구나. 그날 밤 윤석열은 추경호에게 전화를 했구나. 그리고 윤석열은 나경원에게도 전화를 했구나. 도대체 윤석열은 추경호에게 왜 전화를 했고 윤석열은 나경원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요?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그들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요? 이것이 특검이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6월 3일……

(응원봉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억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 응원봉이 저 여의도를 밝혔습니다. 이 응원봉이 온 세상을 밝혔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냈고 온 세계는 대한민국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라고 온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국회에서 저와 함께 헤어지는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말고사부터 잘 보세요. 기말고사 잘 보시고 여러분이 다음에 대통령 되세요. 여러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지 안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니 대한민국의 똑똑한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의 훌륭한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의 마음이 정의로운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의 혁명 그날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는지,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응원봉은 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좀 잘 어울리나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어울립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파면시키고 인수위도 없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꽃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약 70%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문제도 잘 해결하고 전 국민을 향해 침체되었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도 발행했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재명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1728만 표를 얻어서 역대 최다득표입니다. 1728만 표를 얻어서 역대 최다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역대 최다득표,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득표율 49.42 그리고 그 득표수로는 1728만 표 역대 최다 기록,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온 힘을 다해 경제회복을 외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경제회복을 외쳤고 국민 여러분, 코스피가 역사 최고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490을 뚫었습니다. 코스피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윤석열 때 코스피는 2300이었습니다. 2300이었던 윤석열의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로 들어와서 3490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피지수가 상승 출발했고 지금은 3490대로 올라서서 역사상 최대, 최고치 기록을 깼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는 어떠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넘겨줄 때 경제성장률이 4.6%였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넘겨준 경제성장률은 4.6%, 그런데 윤석열 경제 오면서 마이너스 그리고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한국경제신문의 통계에 의하면 900조를 날렸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900조를 날렸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에 날아온 900조라고 하는 계엄 청구서. 윤석열은 민주주의만 막은 게 아니라 경제도 망가뜨렸는데 우리 국민에게 문화, 경제, 민주주의, 언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900조라고 하는 청구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윤석열, 내란으로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거기에 국민에게 엄청난 빚을 안긴 죄로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도 없이 준비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준비해서 정부조직법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마중물을 만들어서 경제 살리기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대한민국의 사람 간의 균형 만들어 내겠다고 정부조직법의 기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AI로 과학으로 기후위기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은 바로 1. 국민주권, 2. 경제 살리기 그리고 모두 다의 균형 발전, AI, 기후 대전환을 대비하는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

하겠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개편 방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기획예산처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한쪽은 재정경제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건가 기획하는 게 기획예산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들였는데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국민에게 드리지 않고 그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고 관저를 만들면서 김건희에 가까운 21그램 등에게 특혜를 주고 그리고 김건희·윤석열과 가까운 자들에게 모든 특혜를 주는 일에 예산을 썼지 국민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국민에게 잘 쓸 건가. 그러려면 기획재정부를 돈을 쓰는 기획예산처와 돈을 거두어들이는 재정경제부 두 갈래로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정부조직법과 재정경제부라고 하는 정부조직법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자마자 전 국민 경제회복지원금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도 10만 원 받았는데요. 저희 남편도 10만 원 받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1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 이 10만 원 가지고 시장에 갑시다. 가서 물건 삽시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았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어디에 쓰셨어요?

제가 시장에 가 보니 시장 상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장사 잘됐어요’라고 하는 분, 이불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불은 좀처럼 안 바꾸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니 어른들이 와서 이불을 사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소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경이 필요한 부모님께 안경도 사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학원비도 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솔솔솔 살아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부를 세워서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잘 만들어서 국민께 나누어 드려서 국민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기획예산처입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또 나누어 주고 이것을 같이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선 국민에게 쓸 돈이 얼마인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을 거두어들인 것을 갖고 잘 나누자 이렇게 해서 정부조직법 1. 기획예산처, 2. 재정경제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정부 재정 잘하라고, 경제 잘 살리라고, 국민이 어려우면 국민에게 돈 좀 잘 배분해 주라고 학생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국

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나눠 드리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께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이자 붙여 돌려드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에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코스피 3490, 3500을 가까이 가고 있으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데 대통령 잘 뽑았습니다. 윤석열 잘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잘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온 정부조직법 1. 기획예산처, 2. 재정경제부 정리가 좀 되시지요, 국민 여러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해가 쏙쏙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특활비 쓰지 말고, 용산에서 청와대로 오고자 하지만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게 청와대가 잘 개보수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겠다고 그래도 용산에 대통령실 둥지를 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는 알뜰살뜰하는 이재명 정부,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 주는 정부, 저는 이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것 못 받아들이겠답니다. 아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내놨는데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준 세금을 이자 붙여 돌려드리게 기획예산처 좀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을 딴지 걸며 필리버스터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빨리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윤석열과 이제 관계도 끊고 윤 어게인도 그만 좀 외치고 그리고 일 좀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들어선 정부,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는 세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입니다.

우리는 환경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후가 심각합니다, 기후가 심각합니다. 더워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홍수가 나는 곳은 너무나 홍수가 납니다. 쓰나미도 너무 심합니다. 황사도 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황사가 어마어마하게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에너지를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의 하늘이 맑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후문제를 정부조직에 좀 뚜렷이 넣겠다라고 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유럽은 에너지를 수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석유에너지 등 너무 많은 것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수입하는 시대를 바꾸자.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받아서 태양에너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받아서 풍력에너지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통해서 수력발전에너지, 이런 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그 에너지를 수출하고 그 에너지로 연금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끊임없는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빚더미에 앉아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성남시를 1등 부자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 사람들이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평가 최하위였던 경기도를 1등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진짜 일 잘해, 진짜 일 잘해, 그래서 이재명 뽑아 보자라고 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후의 위기도 이겨내고 에너지는 에너지 연금으로 만들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저 농촌에 있는 바람이 부는 곳, 햇볕이 많은 곳에서는 농민들이 에너지 연금을 받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에너지·기후 하나로 만들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잘한다, 그래 잘해'라고 박수 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후와 에너지·환경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응기금도 만들고 녹색기후기금도 만들어 이 내용을 또한 기금 만들게 기재부로 이관시켜 주자.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겠다. 녹색성장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해서 에너지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반대하지요? 이것을 왜 반대하지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복습 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획재정부를 돈을 어떻게 잘 써서, 국민이 주신 세금을 어떻게 잘 써서 국민에게 이자 붙여 돌려드려서 경제 살려 내고 국민도 살려 낼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준비해라, 그것을 정책으로 실행해라라고 기획예산처를 만들자, 그리고 돈을 잘 거둬들이자라고 하는 재정경제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정부조직법.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어서 이제 기후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안.

여러분, 신뢰가 가시지요? 이 안에 대해서 오늘 꼭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시간이 가면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빨리 조직을 정비해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유튜브 그리고 SNS, 뉴미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뉴미디어를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자라고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정수를 5명이었던 것을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7명으로 개편해서 공영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미래 미디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SNS 그리고 새로운 뉴미디어…… 이번에 케데헌 보지 않으셨습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케데헌이 나온 것 같은데요. 방송보다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왔으니 이런 뉴미디어.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케데헌,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대한민국의 '오징어 게임' 세계 1위.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안 되겠지요.

다음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권력기관 개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것 먼저 하고 권력기관 개편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의 인공지능 거버넌스입니다.

AI가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안입니다. 과학기술·AI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이 세계에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
민에게 900조라고 하는 영수증을 들이밀었습니다. 900조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새로운 AI 인공지능 생태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휘해 나가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개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은 그 가족까지 하면 2000만에 가깝습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시장의 엄마옷집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옷가게를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옷가게가 아주 잘되었지요.

그런데 저는 이화여대를 들어갔고 이화여대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전두환과 맞짱 떠서 싸웠습니다. 전두환과 맞짱 떠서 싸웠는데 전두환 군부독재는 총학생회장이었던 저를 잡아갔고 저는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받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소상공인인 어머님, 면목시장 엄마옷집 주인이신 어머님, 제가 치안본부에 끌려가자, 제가 수배를 받자 저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가게에 치안본부 그리고 경찰이 매일같이 50명도 넘게 깔려서 저 집 딸 빨갱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서영교라고 하는 총학생회장을 잡고 싶어 했고 치안본부는 치안본부대로 저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치안본부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통화하는 그 기지국을, 공중전화로 통화하는 그 기지국을 찾았는지 제 눈앞에 치안본부가 왔습니다.

저는 머리에 검은 보자기 같은 것으로 뒤집어씌워진 채로 치안본부로 끌려갔지요. 제가 끌려간 걸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끌려가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알리게 되었고 제가 치안본부로 끌려간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그때도, 1986년도에도 제가 어디 있는지 그 치안본부는 압니다. 핸드폰이 없을 때도 말이지요. 공중전화로 통화를 할 때도 말이지요.

그런데 요 며칠 전 돈다발, 비닐에 싸여져 있는 돈다발, 우리는 차마 보기도 어려운 돈다발, 윤석열에게서 나왔는지 김건희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통일교에서 나왔는지 아니

면 어디서 나왔는지 건진 은신처에서 발견된 돈다발, 그 돈다발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검찰이,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그 돈다발에 묻어 있는 지문을 없애기 위해 비닐을 싹 다 버리고 그 안의 흔적을 또 없애기 위해 은행의 흔적이 남아 있는 띠지도 없애고 그리고 스티커도 없애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저희 법사위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돈다발, 띠지도 스티커도 있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른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986년 서영교가 총학생회장 하던 대학교 4학년, 제가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것까지 추적해서 저를 잡으러 오는 대한민국의 치안본부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그 모든 증거 자료를 없애 주고 숨겨 주고. 이런 대한민국 검사, 지금 이 시점에 그 검사는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엄마옷집 딸, 소상공인의 딸. 저희 어머니는 서영교가 수배받자 서영교가 치안본부에 끌려가자 서영교가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자 장사를 못 하고 저를 면회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장사가 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어려워졌습니다. 홈쇼핑, SNS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판매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카카오로, 모든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 테무, 쿠팡 등등으로.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저희 동네에 떡볶이를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됩니다. 그 어르신 두 분이 장사가 너무 잘된다는 겁니다. 잘돼서 그냥 서영교도 좋답니다. 1년 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문을 닫아야 되겠답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너무 잘됐는데 계산을 해 보니 배민에 돈을 떼어 주고 배달에 돈을 떼어 주고 깃발 꽂는 데 돈을 떼어 주고 수수료에 돈을 떼어 주고, 뭐에 떼고 뭐에 떼고 임대료 떼고 하니 돈이 남는 게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된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의 아픔인데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안착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자라고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통과시켜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두는 것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서 꼭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노동을 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죽습니다. 대한민국 빵 만드는 회사에서 대한민국 노동자가 기계를 살펴보다가 빨려 들어가 사망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하다가 안전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빠가 일하러 나갔는데 아들이 일하러 나갔는데 엄마가 일하러 나갔는데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서 기계를 한번 살펴보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세상,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될까요? 그런데 그 대표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그 회사 대표도 사업이 번창하려면 안전장치를 잘해야 되고 노동자도 일 열심히 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같이 안전한 세상, 이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세상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라고

하는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잘한 일 아닙니까?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면서도 기업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 저는 응원하는데 이 법안 오늘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주변에 좀 알려 주십시오.

서영교 보좌진 여러분은 서영교 필리버스터 한다고 주변에 좀 알려 주십시오. 서영교 TV를 통해서도 좀 알려 주시고요. 페북을 통해서도 좀 알려 주시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제가 필리버스터 한다고 좀 알려 주십시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부조직법을 갖고 왔는지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라고 정부조직법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온 정부조직법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통계청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은요 통계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통계청은 통계를 모으는 일을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통계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안에 통계청을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최고 아닙니까? 온 세상에 데이터입니다. AI와 인공지능, 모든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세우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체계를 만들어 나가는가. 그렇다면 통계청을 승격시켜서 국가데이터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착안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갖고 왔는데…… 통계청을 승격시켜서 국가데이터처를 만들자 그리고 이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자, 그래서 국가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자.

이재명 대통령 뛰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또 다른 산업으로 또 다른 세계 주력 육성 산업으로, 그리고 이 데이터를 세계에 던져서 다른 나라가 이 데이터를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 국가데이터처 승격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통과시켜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여성가족부, 윤석열 정권이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했지요.

윤석열은 자기 부인 김건희한테 꼼짝도 못 하면서, 윤석열은 자기 장모한테 꼼짝도 못 하면서…… 요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캠프의 첫 대변인으로 갔던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윤석열 처음 만나러 갔는데 김건희랑 같이 만나서 자기를 면접 보는데 윤석열을 김건희가 그렇게 구박하더랍니다. 민망해서 혼났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나왔는데, 윤석열·김건희한테 면접 보러 갔는데 김건희가 하도 윤석열을 뭐라 그래서 조금 지나 그만뒀다고 하던데요. 윤석열은 자기 부인에게 꼼짝도 못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장모한테 꼼짝도 못 하면서……

윤석열 장모는 윤석열이 구속되던 날인가 어떤 날인가 골프 치러 갔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은 장모를 향해서 우리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장모 구속됐잖아요. 그 장모를 지켜 주느라고 윤석열이 검사 생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는 부인하고 장모한테 꼼짝도 못 하면서 대한민국의 약자인 여성과 가족 그리고 여성과 가족이 더 행복하게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여가부 폐지……

(「김건희가 여성을 싫어했던 겁니다, 남자만 좋아하고」 하는 의원 있음)

그렇군요.

김건희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불법 비상계엄 선언하던 그날, 선포하던 그날 윤석열 술 먹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김건희는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표를 겨냥해서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의 가족, 해체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여성,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여성과 남성 모두 서로 힘을 내자, 그런데 차별은 없애자. 그래서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했다 이겁니다.

성평등가족부 안에 우리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고 그리고 차별도 없애고 청소년도 챙기고 아동도 챙기고 어른도 챙기고 그리고 여성들은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 되어서 그 경력을 더 잘 쓸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는 육아휴직을 든든하게 주고 아이를 낳은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든든하게 주고.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게 행복하고 육아가 행복하고 그리고 육아하는 동안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게 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소중한 기회를 부여하고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이러자고 성평등가족부 하자는 겁니다.

제가 여가위원회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50만 원씩 줍니다. 캐나다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50만 원 줍니다. 예산이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대한민국 인구 소멸합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인구 소멸하니…… 지금은 만 8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이것 만 18세까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 돈 그냥 가서 통장에 쌓이나요? 아닙니다. 또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육아를 하는 그 엄마 아빠가 육아를 위해 쓰는 돈이 되고 이것은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올 6월의 아기 출생률이 작년 6월의 아기 출생률보다 6.9%가 높답니다. 올 6월이요, 작년 6월보다. 올 6월까지 아기 출생률이 0.85인가 그렇답니다. 지금까지 0.7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올 2월부터 높아지고 있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세상도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인구, 2030년이면 반 토막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평등가족부로 아빠도 육아 담당하고 엄마도 육아 담당하고 아빠에게도 육아휴직 주고 엄마에게도 주고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휴직하고 나면 다시 경력 보유로 취업도 하고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것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회사에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래야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

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만 18세까지 50만 원 주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만 18세까지 30만 원인가 줍니다. 그리고 영국인가는 만 20세까지 줍니다. 다른 나라 그렇게 합니다. 인구문제가 어렵다면 해결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 첫째 때 100만 원, 둘째 때 200만 원, 셋째 때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첫 만남, 이 정책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평등가족부 확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여기서 꼭 이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어떻게 할까요? 청소년들이 좀 놀아야 돼요. 저희 지역구는요,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 컴퓨터를 제일 빠른 걸로 바꿔 줬습니다. 그래서 PC방 갈 이유가 없게. PC방 안 가고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쭉 쓰면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지도 않고. 그래서 동네 PC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학교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가장 빠른 컴퓨터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빠른 컴퓨터로 세계 1등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게 이번에는, 저희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딱 2개 있는데 혜원여고와 면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혜원여고에 잔디를 운동장에 싹 깔아 주라고 7억 따다 줬습니다. 그리고 면목고등학교는 5억 정도 드는데요, 벌써 따다 줘서 땅 파고 있습니다. 우선 있는 학교에 잔디 쫙 깔아 줘서, 집보다 학교가 더 멋있어야 되잖아요. 국회 잔디만큼 멋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이번에 잔디를 싹 깔아 버립니다.

중학교도 잔디가 있는 학교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했습니다, 면목중학교에도 잔디를 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중화중학교에서 걱정하는데요. 중화중학교는 지금 마사토가 있는데 그게 연수가 2년 정도 남아서 그다음에 깔면 되고요. 용마중학교는 잔디 예산을 따다 줬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금 석면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그것 없애면 바로 잔디 깝니다.

국민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국가의 예산을 따다 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놉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 나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 화장실은요 호텔 화장실만큼 예쁩니다. 저희 집 화장실도 그렇지 않거든요. 호텔 화장실만큼 예뻐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내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국회의원 처음 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을 안 한답니다. 왜인가 물었더니 석식 비용을 내야 되는데 밥 먹을 비용을 못 내는 학생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 했고 OECD 국가를 다 찾아봤습니다. OECD 국가를 다 찾아봤더니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OECD 국가 중에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잘나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고등학교 학생 모두 다에게 돌려준다는 건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고교 무상교육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서 고교 무상교육이 서영교가 낸 법으로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싶은데 저녁 급식비가 없어서 못 하는 아이들,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법으로 이제 저녁 급식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등록금, 교과서 대금, 급식비 등 한 학기마다 약 260만 원인가가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집니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국민이 낸 세금, 김건희 쓰라고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 부산엑스포 유치한다고 저기 사우디까지 가서 돈은 수천억 쓰고 127 대 28인가로 대패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에는 이자 붙여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영교가 고교 무상교육법 만들었는데요.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 주자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특교 줍니다. 그 특교 받아다가 아이들 화장실부터 호텔처럼 만들어 주자고요.

저희 지역은 많은 학교가 전자칠판으로 싹 다 바꿨습니다. 이제 남은 몇 학교 전자칠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전자칠판 써 보셨어요? 전자칠판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자고요.

저는 고등학교에 헬스장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남자 고등학교에 헬스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헬스장 가고 싶은데 돈 안 들이고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헬스하는 모습.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헬스도 하고 화장실도 좋고. 도서관이요? 도서관은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도서관만큼 예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공부방도 만들어 줘야지요. 국민이 낸 세금 이렇게 하는 게 잘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평등가족부로 아이들의 출생·육아 함께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 행복하게 만들어 주자는 거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경력 보유로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도 키우고 일석이조 좀 만들어 보자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해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자고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 해 드릴게요.

아이들은 초등학교까지는 엄마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손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도 아이들을 잘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 ‘딩가동’이라고 있습니다, 딩가동. 지금 한 6호점까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이 케데헌처럼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같이 책도 읽고 토론도 합니다. 스스로 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와서 공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저희들은 ‘아난딸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함께 공부하고 공연하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100억을 들여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데요 거기는 특정해서 로봇, AI, 드론 그리고 물리, 과학 등을 집중해서 공부하게 합니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좋아해 주시고 힘도 많이 주십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저는 중랑천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랑구입니다. 중랑천이 너무 예쁩니다. 서울에서 한강 다음으로 큰 강, 중랑강입니다. 그 둔치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예전에는 중랑강 옆이 가난함의 대명사였어요. 왜? 그 중랑강이, 중랑천이 넘칩니다. 넘치니까 가난한 분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하니까 이제 중랑강도 넘치지 않고 중랑천은 아주 1급수로 깨끗해졌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중랑천 둔치라고 하는 곳은 강바람을 맞으며 달릴 수도 있는 곳, 강도 보고 그리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제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야외 수영장. 저는 어린 시절 한강에 있는 수영장을 가는 게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한강 수영장을 가서 그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수영은 못 합니다. 그냥 물에 몸 담그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중랑천 둔치에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유아풀 만들고 유아에 펠리카나 입에서 물이 쏟아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놀러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잠실체육관 다음으로 처음으로 50m짜리 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3개나.

돈은요 그리 많이 안 들어요. 왜? 중랑천 둔치는 좀 미안하지만 나라 땅이거든요. 그 나라 땅에 하천 부지라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열심히 애써서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50m짜리 레인을 3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아장아장 걷는 아기부터 청소년까지, 아버지와 엄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여름이면 와서 중랑천 둔치에서 수영을 합니다.

입장료 있습니다, 당연히. 2500원이에요. 그런데 매진됩니다.

저희는 선출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저희들에게 표를 주시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선출직입니다. 열심히 해야 국민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좀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 따다가 그 수영장을 만들어 놨더니 중랑구만 쓰는 게 아니라 파주에서도 오고 그리고 남양주에서도 오고 서초에서도 오고 온갖 곳에서 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낸 세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리고 그 수영장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습니다. 좋게 만들어야지요, 만들 때. 그래서 지금 한 7~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깨끗합니다.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중랑천이 범람을 해서요 넘칩니다. 그런데 수영장만 넘치겠습니까? 다른 체육시설도 다 넘치지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은 워터파크예요, 워터파크. 저 강원도의 워터파크처럼 중랑의 워터파크.

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 달라.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데, 아이 출생률도 세계 꼴찌인데 태어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학폭에 시달리고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부가 책임져야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자살예방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자살예방본부 회의가 국회 대회의실에 있어서 가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평등가족부가 이번에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세상 대한민국, 태어난 아기도 잘 못 돌보는 세상 대한민국, 그 태어난 아기들이 자살하는 세상 대한민국, 이 오명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극복해 냅시다. 그리고 저희들이 극복해 냅시다.

아이들의 학교 컴퓨터가 바깥보다 훨씬 빠르고 교실은 그 의자도 바뀌었고 책상도 바뀌었고 칠판은 집에서 보도 듣도 못한 전자칠판이고 아이들에게는 태블릿PC가 주어지고 아이들의 화장실은 너무나 깨끗해서 호텔 같고, 이러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지요.

제가 국회의원 처음 되었을 때 학교 화장실은 담배 피우는 곳이었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와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니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토론회 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죽하면 '화장실에 담배 연기가 나서 다른 아이들이 위험하니 오히려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깨끗하고 좋아졌습니다. 왜 학교는 더럽고 지저분해야 되지요?

학교 가는 길도 예뻐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길까지 예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중화중학교, 면목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면중초등학교가 있는 길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길이 험하더라고요. 막 낙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예산 요청받아서 길을 싹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으슥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예쁜 조명도 넣어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밝아지고, 그리고 으슥한 골목에는 CCTV도 좀 놔 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명도 좀 넣어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새로운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는 정부, 성평등가족부 기대하면서 제가 여가위 위원으로 예산도 그리고 법도 꼭 챙겨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가위에 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꼭 요구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박스쿨 그리고 극우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고 매춘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상을 훼손합니다. 잘났다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막아선 사람이 오히려 처벌됩니다.

오늘 꼭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왔으니 위안부 할머니…… 우리의 역사를 혐오하고 왜곡한다면 그것은 꼭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독일은 나치 역사, 아직도 나치를 옹호한다면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혐오 발언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고요, 많은 분들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손자이신 김용만 의원도 대표발의했고요.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꼭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부조직법 마지막입니다.

특허청, 특허청 많이 들어 보셨지요? 특허를 내는 곳입니다. 특허를 냅니다.

그런데 특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재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시키겠다는 겁니다.

특허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아 갑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식재산처로 만들어서 이 또한 국무총리실에 두고 대한민국의 특허, 대한민국의 기술, 대한민국의 능력,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기술자들이 그리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모든 사람들이 갖는 특허 지식 이것을 재산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식재산처. 이 특허를 잘 팔아 주겠다, 이 특허로 산업을 살려 내겠다 이런 취지로 지식재산처. 마음에 드십니까? 잘하시네요.

그래서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 모든 것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다 이렇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죽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법사위원님들은 법사위 것밖에 몰라요.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식재산처 파이팅!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성윤 의원님 파이팅!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김기표 의원님 파이팅!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박균택 의원님 파이팅!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데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저를 응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의 기운을 받아서 정부조직법 죽 설명했습니다.

자, 정부조직법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의 필리버스터는 오늘 6시 반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가.

(「끝까지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원래 2시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서 오랫동안 하셔서 또 저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뒤에 계신 의원님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한번 좀 더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것 논의 안 해요, 우리도 동의하는데?'라고 말하면서요. 동의하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조직법은 이와 관련한 각 법안이 있는 곳에서 논의를 하고요, 그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이게 행안부로 옵니다. 정부조직법은 행안위원회 법입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상임위 중에 행안위원회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했고요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본회의로 올라온 겁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법안 논의했지요. 중수청 설치법안, 공소청 설치법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에 빠르게 수사해서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으면 빠르게 그것을 기각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다 논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검찰청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습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랬더니 수사를 지 마음대로 하는 검사들이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검사들이 저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그런 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비기를 잘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특수부라며, 중수부라며 이렇게 '어허, 내 말을 잘 들어'라고 하면서 고위직으로 간 검사들 중에 수사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기소도 마음대로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온 세상에 떠벌려서 언론하고, 또 같이하는 언론하고 그리고 언론들에게 뭐가 있는 것인 양 막 내밀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날리고 그리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공작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좋은 수사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검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그 대표적인 검사가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러더니 대통령후보로 나왔고 그러더니 대통령이 되어서 이재명 정적을 마구잡이로 난도질하듯이 수사하고 그리고 증거도 없이 증거를 조작하고 그리고 피고인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가족까지 동원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약점을 잡아서 별건으로 뒤흔들고. 그래서 이재명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검사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입니다.

말 안 듣는다고, 김학의를 봐주라고 이성윤을 수사하고 기소한 그 검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하고 붙었다가 수사당하고 기소당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요 김학의, 김학의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법사위원이었어요. 김학의라는 자가 법무부차관으로 옵니다, 박근혜 때. 김학의라고 하는 자가 법무부차관으로 옵니다, 박근혜 때.

그런데 말이지요 김학의란 자가 법무부차관으로 오는데 저희에게 제보가 옵니다. 어디로부터? 경찰 쪽으로부터. 김학의의 비디오를 경찰이 다 갖고 있었던 거지요. 김학의의 별장 비디오를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법사위인데 그게 왔어요, 김학의가 별장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김학의에게 뇌물도 쓰고 성접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여자도 붙이고 그랬던 그 자가 이 모든 증거를 영상으로 녹취해 놨던 거지요.

그런데 그 녹취를 당했던 또 한 명의 여성이 나오네요. ‘법원 별장 동영상 김학의 맞다’. 제가 저 뒤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것. 이것인데요. 이 여성이 너무나 당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지요. 이 내용들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게 경찰에 의해서 다 묻힙니다. 이게 검찰에 의해서도 묻힙니다. 그렇게 묻혔는데 법무부차관으로 떠오르자 세상이 가만 안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6일 만에 법무부차관에서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검찰이 검사가 이렇게 접대받고 그것도 별장에서…… 그 뒷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니.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시키고 했더니 윤석열이 이와 관여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검사들을 오히려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지요.

국민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검사하고 경찰하고 같이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검사하고 경찰하고 기자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나 넣을까요? 술을 먹었습니다. 술값을 누가 낼까요? 단란주점 주인이 낸다고 하지 않나요?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좀 변해서요. 누가 술값을 냅니까? 변호사가 내지 않나요?

지귀연 판사하고 변호사가…… 룸살롱입니까, 단란주점입니까? 그 공간은 단란주점이었다가 룸살롱으로 바꿨다가 단란주점으로 바꿨다가 영업소를 그렇게 바꿔 가면서, 이곳도 경찰이 덮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든 지귀연 판사가 그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같이 접대를 했던 쪽에서 어떻든 그 사람인지 아니면 또 전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진과 함께 제보가 들어왔고 항상 술값을 냈고 접대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검사, 이런 판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하고 그래서 판사직, 검사직 파면해야 합니다. 해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대로 남아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수사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법사위의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문제 지적하고 제보받은 것 이야기해 줘야 접대받고 뇌물받았던 자들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겁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 사람들이 검사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응원봉을 들고 왔던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요 검사도 되고요 국회의원도 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말이지요, 그때 그 영상을 그 학생들 중에 찍었는지 그 영상이 트윗에 올라갔고 1000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이, 제가 그렇게 발언하는 영상에 학생들이 까르르

웃는 그 짧은 영상이 1000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하라, 파면하라' 외치더라도 공부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제는 판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윤석열을 파면시켜 본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저 나쁜 정권을 탄핵시켜 본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트윗이 1000만 조회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로 많은 것들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옷집 딸이었습니다. 수배도 당했고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의자 뒤로 손을 놓고 그 손에 수갑을 채운 채 의자를 통째로 들어서 욕조에 빠뜨렸지요. 저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 살았고요. 저는 12월 6일 날 체포되어서 그런 일을 당했고 다음 해 1월 14일 날 체포되어 갔던 박종철 학생은 그렇게 물고문을 당하고 죽어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대문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가 가셨던 징벌방도 갔다 왔습니다. 교도관들과 싸우다 징벌방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운동도 하고 어머님들 공부 가르치는 일들도 하고, 그렇게 10년 했고 여의도로 오게 되었고 여의도 당직자로 일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영광스럽게 춘추관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상공인인 어머님께서 파킨슨으로 몸이 굳어 가시던 그 해에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출마해라. 정치시키겠다고 내가 학생운동 때부터 기다렸고, 40년 기다렸다. 면목시장의 엄마옷집 딸도 국회의원이 되는 걸 보여 줘라.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서민을 위해 일해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오빠에게 후보등록을 하게 했고 저는 그렇게 출마해서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처럼 저는 그때 12월 13일 이 국회로 왔던 학생들에게 그리고 12월 14일인가 윤석열 탄핵을 시키러 온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꼭 국회의원도 되세요. 그리고 검사도 되세요. 그리고 판사도 되시고 대통령도 되세요'. 저는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세상은 좋아집니다'. 저는 지역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을 만났으니 다음에는 국회의원보다 더 잘 크세요'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마음먹으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주요한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 즈음해서 왜 검찰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를 세게 하더라고요. 세게 하고 나니까 저를 기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사도 받고 기소도 되었습니다. 그 검찰의 수사도 받고 기소도 됐습니다. 말실수였습니다. 재판을 받느라고 얼마나 변호사비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변호

사비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낭비했고요. 변호사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 법원에서는 말실수다라고 해서 그냥 저에게 무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실수도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되는 거고 제가 잘못된 판사를 만났으면 저는 국회의원직을 그만뒀어야 했을 겁니다. 이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검사에게 국회의원직을 그냥 날려 버릴 권한이 있는 거지요.

수사를 하고 나니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기소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한 사람에게 기소하지 말고 수사는 수사한 사람만 하고 기소하는 사람은 기소만 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프랑스도 가 보았고요 그리고 영국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검찰이 기소만 합니다. 수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한 수사가 완벽하지 않으면 검사가 '이거 증거가 좀 부족한데요. 증거 좀 채워 오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더 증거를 채워서 주면 검찰이 그게 맞으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함부로 해 댑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가슴이 아파서, 무서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이 정권 바뀔 때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라고 검사는 기소만 하고 그리고 검사 중에서도 중대범죄를 수사할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오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수사를 하고 서민들을 위한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이 같이 할 수 있는지도 보고 이러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왔고, 그것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자는 것이며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고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져가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로 가면 다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감시해야지요. 제가 치안본부의 수사를 받을 때는 치안본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치안본부를 없애 버리고 경찰을 외청으로, 행안부의 외청으로 두게 되었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너무 강해진 검찰을 공소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지금도 검사들이 다 수사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하는 검사는 전국에서 다섯 군데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것을 검찰은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법사위원님?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든 검사가 다 수사하는 게 아니지요?'. 검사들 중에 서울 광역의 다섯 군데가 수사를 하고 다른 검사들은 기소를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서울검찰청, 중앙지검 같은 곳이 수사도 하고 그리고 기소도 하니, 여기가 특수부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란의 밤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띄워 주십시오.

윤석열이 12월 3일 갑자기 TV에 나타납니다.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저의 카톡에 SBS 보도라며 올라오길래 저는 그냥 AI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TV에 자막으로 뜨더라고요, 제가 MBC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SBS를 틀어 보니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뭐라며 선포했습니까?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자고 했습니다. 서영교 척결될 뻔했습니다.

그날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있지요. 이재명,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등등 이름이 나왔지요. 그 사람들은 그날로 잡혀갈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날 이야기가 증언을 통해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원식 등 상황이 되는 대로 다 먼저 체포해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가권력이 국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침범해서 국회 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게 바로 내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가 군을 동원해서 국가기관 국회·선관위 등, 지자체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게 내란입니다. 그 내란을 일으켰고,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이야기한 게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어느 날 법사위에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간첩죄 개정안이었습니다. 간첩죄를 개정한다는 겁니다. 간첩은 뭡니까? 북한과 내통해서 북한을 이롭게 한 자는 간첩죄입니다. 그런데 이 간첩죄를 갑자기 개정하자는 겁니다. 적과 내통해서 적을 이롭게 하면 간첩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러면 적입니까?’라고 물으니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또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적입니까?’라고 했더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가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는데 왜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되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표시도 없고 어떻든 적과 내통해서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정보를 준다면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중국과도, 아니면 북한을 떠나서 다른 나라와도 엮어서 대한민국 주요한 인자들을 간첩으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 적이 어느 나라인지 법무부차관이 말하는 것도 애매하고 수석전문위원이 말하는 것도 애매하다. 그리고 중국 등, 아니면 다른 나라 등 기관과 내통해서 정보를 준다면 산업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는데 굳이 간첩죄를 만들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산업기밀 보호법과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적용하면 아주 적용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더 높이고 간첩죄로 하든지. 그래서 군사기밀 보호법과 산업기밀 보호법을 개정하고

간첩죄를 다시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루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렇게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자며 모든 사람을 간첩죄로 엮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윤석열은 이야기합니다. 간첩, 간첩, 간첩 얘기하면서 간첩죄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모두 끌어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은 간첩죄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어떻든 제가 그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막았고 미루면서 우리는 간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사위원 여러분?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때 간첩죄를 통과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별 내용도 없이 간첩죄를 개정해서 다른 나라와 내통했다고 뒤집어씌우면 그냥 걸려들 뻔했습니다. 중국 갔다 왔다고, 아니면 미국 갔다 왔다고, 아니면 일본 갔다 왔다고 거기랑 내통했다고 정보 줬다고 해 버리면 옴짝달싹 없이 북한과 연결 안 되어 있어도 간첩이 되어서 척결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산업기밀 보호법이 있잖아요’, 박균택 의원님이 그 얘기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렇지요? 이성윤 의원님도 그때 저랑 같이 소위여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강화하든지 하고 그것 개정하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사위원님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김기표 의원님은 그다음에 오셨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김기표 의원님 간첩되는 것 막아 드렸어요.

이성윤 의원님은 그냥 간첩 될 뻔했어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상원 수첩에 이성윤 이름이 나왔다고, 그렇지요? ‘이성윤은 저기 백령도로 가서 배를 침몰시킨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해 드린 거예요. 고마운 줄 아세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성윤 의원님과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이성윤 의원님 이름이 진짜로 나왔거든요. 주고받았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제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두 번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쓰려면 한 번만 쓰지’, 처음에는 제 이름이 없어 약간 서운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두 번이나 있어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여러분? 국회로 다 와서 그날 해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백령도의 꽃게밥도 되었을 것이고요.

저는 치안본부에 끌려갔던 그때처럼, 서대문형무소에 온몸이 칭칭 묶인 채로 가두어졌던 징벌방처럼 무서웠습니다. 저는 당해 봤거든요. 제가 숨어 살았던 집 앞에 치안본부가 딱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검은 보자기를 씌워서 치안본부로 끌고 갔지요.

저는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다고도 생각도 못 했고요. 여기 오면 일망타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막 들어오면서 ‘국회에 가서 비상계엄을 과반이 넘게 해제해야 돼. 빨리 국회로 가’ 이래서 그때 깜짝 놀라서, 국회의원들께서 ‘국회로, 국회로 갑

시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가면 일망타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제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왜?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얘기할 때도 믿지도 않았을뿐더러 해제 방법까지 생각도 못 했기 때문입니다.

80년 비상계엄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저항하면 광주 사람들처럼 총에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광주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의 계엄 군인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폭도로 매도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80년 광주입니다.

저는 1983년도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화장실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그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기자가 되고 싶었던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학회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왜? 광주에서 그렇게 죽어 간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처럼 저도 총에 맞아 죽거나 총칼로 머리가 깨어져 날아가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칼에 두부처럼 가슴이 잘려지거나 임신한 사람은 뱃속의 아기가 꺼내지거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지만 우리는 대학생이 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나도 저렇게 죽어 갈 것이기 때문에 학생운동도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운동을 했고 잡혀 가고 언젠가는 광주의 그들처럼 죽어 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치안본부에서도 죽어 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전두환과 맞짱을 뜰 수밖에 없었고 그때 비상계엄을 배웠던, 경험했던, 사진으로 보았던, 그러나 끝내 전두환을 무너뜨려서 승리했던 저와 몇 사람들은 국회로 모이면 국회에서 총칼로 맞아 죽어 갈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배웠습니다,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걸. 그렇지만 그것도 무서웠습니다. 그것도 무서웠는데, 여기 계셨던 이학영 부의장님은 집 밖도 못 나오면서 거기서 차를 타면 추적당하니 논두렁을 멀리 걸어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타셨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수배를 받았는데 성대 앞에 후배 집에 숨어 살았는데 아침에 나왔는데 그 앞에 치안본부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언제 어떻게 내가 잡혀갈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듣고 그 시간에 국회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경찰로 인해서 에워싸 있었고요. 그렇지만 수소충전소 쪽에 우리 국민들이 나오셔서, 국민들이 나오셔서, 우리 국민들은 총칼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국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국민들 곁에 있고 싶었고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국회로 들어올 때 국민들이 담을 넘겨 주셨고 그 담을 넘겨 줄 때 경찰들이 못 넘어오게 막았지만 그 경찰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저희들에게 담을 넘게 해 주었고, 저는 그 경찰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내렸던 자들은 잘못되었지만 그 경찰이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전사는, 나는 새도 잡는 게 특전사 아닙니까? 저 멀리 있는 물체를 총을 쏴서 다 폭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전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전사들이 국회 들어올 때도 담도 잘 못 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지도 않았고요.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그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는 대퇴부에 총도 안 맞았고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가 날아가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아들들 군인이, 대한민국의 우리 아들들 경찰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윤석열 계엄을 해제시키게 해 주었고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이곳에 옴으로써, 용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 앞을 지켜 줌으로써 윤석열의 계엄은 해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국민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서웠습니다. 1983년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정말 행복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 학관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학관 잔디에 앉아 있는 동안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선배들이 경찰…… 그때는 사복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짭새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백골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 주둔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도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 그들에게 무슨 일 당할지 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선배의 머리끄덩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잡아서 질질 끌고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4학년 선배 언니들이지요. 그것을 2학년 때 보았고 2학년 때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독재가, 어떻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전두환이 광주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사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에 머리가 잘려져 나간 사람, 가슴이 잘려져 나간 여학생……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험해서 말하지 못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임신되었지만 파헤쳐진 임산부.

우리는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온다' 다 읽으면서, 그 소년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80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중3과 고등학교 1학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년은 저하고 나이가 같은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년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친구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친구가 누나가 들어오지 않자 누나를 찾으러 나갔다가 그 소년이 계엄군에 의해서 죽어 가는 것을 본 그 소년. 중3짜리 한 명,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은 죽었고 또 거기서는 중3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3짜리 친구는 죽었고, 그 친구를 찾아 헤매고 누나를 찾아 헤매던 또 한 명의 중3짜리 그 친구가 가게 된 곳이 광주시청. 광주시청에서 시체로 들어오는 사람들, 광주시청에서 부상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돕던 그 친구, 그 소년, 그 소년이…… 거기 광주시청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나랑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가라, 너는 어린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나옵니다. 나오는 친구가 총을 맞아 죽어 갑니다. 그 소년, 그 소년과 다른 사람들……

소년의 관점에서 쓰여진 글, 그 소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 관점에서 쓰여진 그 글. 80

년의 광주. 그 글이 작년에 한강 작가에 의해서 노벨문학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잘 쓰여져서 그 역사를 다시 되새기면서 노벨문학상이 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은 그런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우리나라 국민은 윤석열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김건희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날 국회에 온 비행기 한번 볼까요? 헬기입니다, 헬기. 헬기가 11시 50분에 국회에 착륙했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특전사가 국회에 들어왔네요. 국회에 들어온 사진이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간 사진들이네요, 군인들이.

국민 여러분, 내 새끼 잘 키워서 나라 지키라고 군에 보냈더니 윤석열이 지 도구로 썼어요. 국회에 들어와서 점령하라고 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고 선관위에 가서 점령하라고 하고 끌어내라고 하고. 윤석열이 말입니다. 내 새끼, 내 소중한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지 비상계엄의 도구로 썼어요. 이런 윤석열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 저 서영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함께하시는 분이 박균택 의원님 그리고 김기표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었습니다. 저희 하루에 한 번씩 기자회견 하고 하루에 두 번씩 기자회견 하고 고발장을 수십 번 써서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에 가서 고발하고 공수처에 가서 고발하고, 김건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카톡 만천하에 공개하고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전화 통화내역 만천하에 공개하고.

명태균 왈 '명태균을 구속시키면 한 달 안에 탄핵될 텐데 그리고 파면될 텐데 그래도 될까' 이러고 구속되고 딱 한 달 만에 진짜 파면되고 탄핵됐어요. 왜?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와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아, 지금 그것 녹취로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아닙니까? 윤석열은 대통령 될 때, 대통령후보 될 때 불법 여론조사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은 뭐가 법인지 뭐가 법 위반인지 법 위에 군림하느라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김건희가 했던 모든 불법을 윤석열이 다 해소시켰어요. 장모가 한 불법도 검사로 해소시키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윤석열이 전부 다 무죄, 무혐의…… 아니,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고. 최은순의 뭡니까, 잔고 증명 위조도 다 수사도 제대로 안 하게 하고. 도이치모터스도 그리고 주가조작해서 돈 번 것도…… 뭐라고? 마누라는 4000만 원 손해 봤다고? 에이,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건 거짓말할 때 머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좌우로 막 흔들면 거짓말이 뻔한 것 같아요. 그런 거짓말 다 하면서 다 막아 줬던 윤석열, 그래서 뭐가 법 위반인지 몰라요. 신정아 잡아넣어서 그렇게 무섭게 취조해 대 놓고, 지들은 불법 다 하고도 처벌도 안 받고. 그래서 명태균이 가지고 온 불법 여론조사가 불법인지 윤석열은 생각도 안 하고 그 불법 여론조사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는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에게 가서 돈 받아 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1억 6000만 원어치인가 받아 오라고 그랬더니 돈은

안 받아 오고 뭐 받아 왔어요? 공천받아 왔잖아요, 공천.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게 아닌 걸 불법으로 받았으면 불법 여론조사, 위반. 그리고 윤석열이 그사이에 돈 안 주고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딸 주라며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돈을 500만 원 줬으면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 그렇지요? 위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잖아요. 김영선에게 공천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육성이 만천하에 나왔잖아요. 그 육성은 도대체 누가 제공하는 걸까요? 윤석열 목소리,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이 전화를 합니다. "내가 김영선 좀…… '선거 때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 좀 공천 주라고 해'라고 했어, 김영선 공천 주라고. 그랬더니 당에서 말이 많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천 주라고 하면 선거 개입, 선거중립의 위반,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박탈 그리고 윤석열이 대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 돈을 주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선거법 위반, 그래서 당선무효.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이 수사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중단됩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어서 윤석열의 당선무효형이 기다리고 있으니 윤석열이 당선무효가 되면 윤석열 당선되어서 보전받은 선거보전기금 400억을 국민의힘은 다 게워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냥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검이 꼭 잘 수사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것 모두 다 특검에, 당시 검찰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검찰에 고발하면서 또 하나 무엇을 고발했느냐? 윤석열이 선거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모는 10원 한 푼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최은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잔고 위조로? 그리고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손해만 봤어'. 김건희, 지금 특검에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3억 이익을 봤어요, 주가조작으로. 김건희만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본 것도 이번에 특검이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14억, 최은순 9억 이러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이렇게 이익을 봤는데 손해 봤다. 그리고 최은순, 남에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다. 이것 검사들은 서영교가 말실수해 가지고 똘똘 말아서 수사당하고 기소당했듯이 기소해야지요. 이번에는 특검이 기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기소하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중지되어 있으니 당선무효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잘못 만났고 윤석열에 의해서 농락당했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이용해 먹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윤 어게인 외쳤고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마침 하나 더 있네요. 이 사진을 한번 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말이지요, 윤석열 관저에서 체포돼 나올 때입니다. 체포 영장으로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 안 되려고 용을 써요. 그러면서 경호처를 동원하고 그리고 총도 쏘게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비화폰 서버에 다 남아 있어요. 이것은 공무집행방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체포해 가지 말라고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이름에? 저기 한번 보면 김기현 나경원 조은희 박대출 김정재 이만희 이런 의원들이 계시네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관저 앞이지요? 저는 저것 보면서……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고요.

제가 오늘은 검찰이, 검사가…… 모든 검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검사가? 나쁜 검사가, 나쁜 검사가.

이것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요직에 자리잡고 앉은 검사들인데요. 나쁜 검사들이 대한민국 다 망쳤다. 윤석열은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장관 검사, 법무부차관 검사,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검사,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검사,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검사,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검사,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검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검사. 뭡니까, 이것? 이것 뭡니까, 도대체?

법제처장 검사, 보훈처장 검사, 행안부장관 이상민 검사, 통일부장관 권영세 검사, 국정원 조상준 검사,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박성근 검사, 공정거래위원장 강수진 검사,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찰청이 폐지되면 좋은 검사들께서 기소를 집중적으로 담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력 있는 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검사들과 실력 있는 수사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십시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으니, 이제 1년 후에 생기게 되면 얼마나 수사가 빨라지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훨씬 수사를 잘할 거거든요. 그런데 기소까지 맡아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훨씬 더 크게 또 수사를 하고 수사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면 얼마나 피해자, 범죄피해자 국민들이 빠르게 그 피해를 복원할 수 있도록 잘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수사가 너무 늦어요. 피해자들이 힘들어요'. 검찰에서 한 번 더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나눠서 한다면 얼마나 수사가 빨라지겠습니까?

행안부장관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가 늦어집니까, 훨씬 빨라집니까? 훨씬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무위원석에서)

예.

○서영교 의원 저는 오늘 그 얘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수본에서 수사를 합니다.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권마다 공작하는 검사 없애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 잘하는 수사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사가 빨라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훨씬 더 피해자들이 범죄자로부터 보호된다. 그리고 누구나 묻지 마 고발, 묻지 마 고소 이런 것은 또 빨리 보고 거기서 빠르게 기각시켜 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여러분, 검사가 다가가기가 쉽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다

가가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경찰 그런 분들에게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해 버리니까 막강한 권력으로 공작하고 조작하고 정적 죽이고 사람 패 버리고 그리고 재산 빼앗아 버리고 이래 왔던 나쁜 짓, 그런 검사들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검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나쁜 짓 한 검사들, 그런 검사들은 전부 다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고 파면시키고 해임시켜야 합니다.

저희 며칠 전에 법사위 현안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문회에서 나쁜 짓 했던 사람들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파면입니다. 해임입니다. 그거는 법무부장관께서 그리고 검찰이, 경찰이 다 수사해서 파면시키고 해임시켜야 합니다.

일 잘하는 검사, 정말 정의로운 검사,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 이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공소·기소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는 수사가 더 좋아라고 하면서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검사분들과 뛰어난 수사관들, 뛰어난 경찰들은 또 중수청으로 가시고 또 뛰어난 수사, 뛰어난 경찰분들은 국수본에서 또 수사하시고 이런다면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면서 수사는 더 빨리 이루어지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기소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 개가 나눠지면 지금도 수사가 느린데 더 느려지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고.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 퍼트린 자는 나쁜 사람, 거짓말쟁이.

지금은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또 들여다보면서 공작하고 또 조작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갖고 싶은 것만 가지고 수사해 대느라 기소에 신경도 못 쓰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장동 수사한다고 도대체 몇 명을 불러다 댔습니까? 압수수색을 도대체 몇 번 했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백 명이었던 것 같고요. 압수수색은 사백 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장동 수사한다고 경기도를 14박 15일 수사했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14박 15일 압수수색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오늘 밝히는데요 건진, 윤석열 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에서 최재현 검사 등이 건진법사 은신처를 압수수색하는 데 얼마큼 걸렸을 것 같아요? 이재명 압수수색한다고 수도 없이, 수백 번, 한 사백 번 압수수색한 거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압수수색한다고 14박 15일을 앉아 가지고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건진을 그렇게 압수수색 안 하고 놔두고, 왜? 김건희가 있는데 윤석열 있는데 건진을 압수수색하겠어요? 건진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치고 난 다음에 12월 17일 날 압수수색하러 가거든요. 맞지요? 12월 17일 날 압수수색하러 가는데 압수수색 얼마큼 한지 아세요? 7시 55분에 압수수색하러 가서요 9시 15분에 마쳐요.

제가 그것 보고…… 우리는 검사님들하고 달라서 좀 다른 디테일에 강하거든. '아니, 여기에서 나온 돈다발을 이들이 없앴어?'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건진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7시 15분에 시작해서…… 55분, 7시 15분도 아니고 7시 55분에 시작해서 9시 15분에 끝났다고 써 있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진짜는 더 안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했다고요? 거기 압수수색 왜 하러 간 거예요? 그 돈다발 치워 주러 간 것 아니에요?

윤석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하고 12월 며칟날 탄핵되지요? 14일 날 탄핵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건진 거기 가서, 건진 은신처에 가서 압수수색하는데 돈다발 없애 주러 간 것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400번 정도 압수수색하는데요 경기도에서 14박 15일……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나는 14박 15일 압수수색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살았대요. 그렇게 해 놓고 건진 가서는 1시간 정도 압수수색하고 온 거지요. 7시 55분에서 9시 15분이면 착각하면 7시부터 9시까지로 보이게 되잖아요. 7시부터 10시처럼 보이게 된다고요. 참 머리 써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 검사 집단들, 한 번 더 해 볼까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차관 이노공……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차관 이노공,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비서관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비서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주진우, 이시원, 윤재순, 강의구 전부 다 검사라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검사. 법제처장 이완규 검사, 보훈처장 박민식 검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검사, 통일부장관 권영세 검사, 국가정보원 조상준 검사,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박성근 검사, 공정거래위원장…… 여기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나? 이때는 유력으로 써 있네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검사. 강수진 그때 이건 유력으로 써 있어서 한 번 더 봐야지 되겠네요.

이렇게 검사로 도배를 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망가지고. 검찰 폐지까지 만들어 낸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얘기하다가 나왔으니 한번 하고 갈까요? 건진이 누구인가, 건진? 윤석열 등을 탁탁 두들기던 사람이 건진이지요? 그렇지요?

윤석열에게 면접 보러 갔던 윤석열 대변인이었던 분인가 뭐 어떻든 전부 다 나오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아주 무시하더라.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윤석열을 김건희가 아주 무시하더라. ‘오빠, 명태균 선생님이 해 달라는 것 아직도 안 했어?’ 이러면서 쥐 잡듯이 잡더라. 그러면 김건희가 그러는 걸 봤으니 건진도 윤석열에게 비슷할 것이고 최은순도 비슷할 것이고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도 비슷할 것이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윤석열이 아주 헛짓을 해서 김건희 가족이 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명수 기자한테, 이명수 기자가 방송하는 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왜 검찰이 기소와 수사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건희·최은순의 23억 도이치모터스 관련입니다. 주가조작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을 했어요. 김건희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 인터뷰에 보면 김건희가 갑자기 재산이 늘어요. 재산이 느니까 그 언론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산이 느냐고 했더니 주식 투자 열심히 해서 재산이 늘었다고 답합니다.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서. 뭐라더라, 그때? 좋은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네, I 뭐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재산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14억,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보고로 김건희가 14억 그리고 최은순이 9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 수천만 원’. 후보 시절에 이렇게 거짓말하면 뭐 위반입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당선무효형입니다.

한 번 더 알려 드립니다. 저 말은 후보 때 이야기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저것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형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무효의 위기다.

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났잖아요?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공직선거법은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1. 이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파이팅.

또 오세요.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여론조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 그건 선거자금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여론조사를 받은 만큼 공천으로 대가를 줬다. 이건 뭡니까? 뇌물수수.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중립의 의무가 있어서 공천에 개입했다 그러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그리고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손해 끼쳐서 감옥 갔다 왔지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이 얼마면 당선무효지요? 100만 원이면 당선무효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특검법으로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당선무효도 됩니다.

그러면 보전받은 비용 400억은 누가 물어내야 됩니까? 국힘당이 물어내야 합니다. 어쩌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막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후보 못 되게 하고 이재명을 날리려고 그렇게 이재명을 압수수색하고 난도질하고 수사하고 불러내고 욕하고 그리고 기소하고 형량 2년씩 때려 버리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 검찰이 저랬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국민이 생각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국민의힘도 개혁해야 된다고 같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공소청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중대범죄수사청은 훨씬 더 수사를 빨리할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국민 여러분을 범죄로부터 지켜 줄 겁니다. 검사를 찾아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찾아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훨씬 더 국민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대한민국 범죄자를 추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획기적인 큰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된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국민을 위해서 훨씬 더 빠른 수사를 이끌어 내는 아주 좋은 개혁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믿으시면 저희가 꼭 그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최은순하고 김건희가 이렇게 돈을 주고받아서 이번에 특검이 녹취를 들어 보니까 김건희의 녹취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주가조작해서 몇 프로는 누구에게 떼어 준다고. 이런 걸 특검은 찾아냈는데 그 전에 김건희 무혐의 친 이창수 지검장과 그 검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특검이, 김건희가 이 이상거래를 했고 이득을 봤고 이 이득을 보면 40%를 떼어 준다고 하는 녹취가 있는 걸 특검은 찾아냈는데 검찰은 찾아내지 못하고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김건희는 무혐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검사 전부 다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기억을 한 번 더 되짚어 볼게요. 김건희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수사 안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수사를 한답시고 김건희가 원하는 곳으로 검사가 왔습니다. 경호처의 모처라고 하는 곳이지요? 거기로 와서 검사들이 핸드폰을 반납하고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미친 것 아닙니까? 검사가 지 핸드폰 반납하고 핸드폰으로 녹음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원하는 장소로 가서 김건희를 만나서 김건희의 얘기를 들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는 그 특검이 찾아낸 녹취가 있는데 그런 녹취는 다 숨기고.

제가 그때 법사위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의 그 주가조작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느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느냐라고 했더니 이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이 아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압수수색영장이어서 이들은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온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의 하수인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뺏긴 채 가서 수사랍시고 황제 김건희 모시기를 하고 김건희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한 것처럼 브리핑을 해 대고 그리고 다음 특검에서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면죄부 주느라고 무혐의 쳐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4시간씩이나 나와서 브리핑한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창수 지검장이고,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이름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검사들 오늘 낱낱이 온 세상에 고발하면서 이창수 지검장 등 수사해서 무엇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이번에 일벌백계해서…… 그들이 연금을 받고 산다고 하는데요. 연금도 못 받게 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원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상원 맞습니다.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그리고 잘했다고 4시간 브리핑하면서 압수수색 다 했다고 말해서 제가 압수수색한 목록을 쫙 달라라고 해서 받아 봤더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 안 해 놓고 압수수색했다고 거짓말한 조상원.

법무부장관님, 전부 다 수사해 주세요.

오늘 여기 나와 계신 행안부장관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다 수사해 주세요.

검사들 수사는 검사 3급 이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게 했지만 그런 경우에 전부 다 또 경찰들이 수사할 수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하고 같이 수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수사해서 일벌백계해 주십시오.

그때 김건희 수사를 할 때 말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날의 재구성', 경호처 건물에 가서 자기 핸드폰도 다 반납하고 그리고 김건희 앞에서 이렇게. 아주 수상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웹툰까지 나와요.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검사들. 창피하게. 그러고도 정의로운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심우정하고 김주현이 10월 10일, 10월 11일 비화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12분 32초 통화, 11분 36초 통화, 이런 통화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비화폰으로 통화할 대상인가요?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우정하고 민정수석으로 있던 검사 김주현이 통화를 하는데요. 김주현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민정수석 김주현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김건희 봐달라고」 하는 의원 있음)

김건희 봐달라고.

김건희 수사가 언제였는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김동아 의원님?

그런데 이러다가 뭐가 터지냐면, 심우정하고 김주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요. 이게 10월 10일, 10월 11일 통화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비화폰 통화한 사람이 여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주현, 심우정 그리고 김건희. 김건희가 비화폰을 쓰는 대상인가요?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 되지요. 법무부장관께서 딱 이야기해 주시네요.

민정수석은 비화폰을 쓰는 대상인가요?

법무부장관 하시면서 비화폰 써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때 여쭤봤거든요. '법무부장관 하면서 비화폰 쓴 적 있어요?', '우리는 비화폰 본 적도 없어요'라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저들은 민정수석이 비화폰을 쓰고 김건희가 비화폰을 쓰고 심우정이 비화폰을 써요. 비화폰 쓰라고 한 거지요. 이때 비화폰을 쓰면 다 숨겨지니까. 그렇지요? 숨겨지는데 이 내역이 다 나왔어요. 왜? 숨겨지는 줄 알고 비화폰 삭제했는데 저 안에 있는 비화폰 서버가 거기까진 삭제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화폰 전부 다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화폰에 윤석열과 곽종근, 윤석열과 김용현, 윤석열과 박성재, 윤석열과 이완규, 윤석열과 이상민, 윤석열과 조희대, 윤석열과 한덕수 들어 있는지, 김건희와 한덕수, 윤석열과 국민의힘 찢윤들 들어 있는지 전부 다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감옥 갔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비화폰 주고받으면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김건희 관련한 사건들 그리고 김건희와 이들이 그걸 가지고 비화폰을 썼겠는가? 저는 계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건은 터졌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동안 계엄 준비하던 거는 어떻게 되지? 심우정이는 마약을 무마했는데 마약은 어떻게 되어 있지? 김주현은 4인 회동을 안가에서 했다고 하는데……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상민 그리고 용산에 있던 무슨 비서관 이렇게 같이 안가에서 회동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누구를 잡아들이고 누구를 족치자고 이야기했을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화폰 내역 다 공개해야 한다. 비화폰의 서버에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희대하고는 연락이 없었는지, 지귀연하고는 연락이 없었는지, 다른 검사들하고는 누구하고 연락이 있었는지 저는 다 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17일에 불기소처분……」 하는 의원 있음)

10월 17일이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10월 10일, 10월 11일 이렇게 김주현하고 심우정이 비화폰 통화를 합니다. 몇 분 동안? 12분 32초, 11분 36초. '김건희는 어떻게 조사를 받을까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레드팀 뭐 어쩌고저쩌고 운영한다고 쇼를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거 다 해서 김건희를 어떻게 잘 모실까? 10월 17일에 김건희 무혐의 칩니다. 어떻게 잘 모시고,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원석,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직접 전화 통화를 했던 건 아닐까? 이러면서 이원석은 날아가지요. 이원석은 날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심우정이 와서 김건희도 지키고.

심우정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진우는 뭣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김상민 검사가 김진우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우환의 그림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김진우가 김상민에게 돈을 줬답니다, 김상민 검사에게. 김상민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억 5000인가 6000이라는데 김진우 계좌 등에서는 돈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돈다발이 있었나? 아니면 김진우는 돈을 안 주고 김상민이 공천 또는 여러 가지의 알선·청탁을 위해서 그 그림을 사서 줘 놓고 김진우한테 떠넘기나? 이들은 어떻게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인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상민, 심우정, 김주현, 이 비화폰. 심우정, 김주현 낱낱이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윤석열을 감옥에 넣었는데 윤석열이 어느 날 개선장군처럼 풀려나옵니다, 구속이 취소돼서. 개선장군처럼 풀려나와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전부 다 너무 놀란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윤석열이 풀려나올 수가 있지?'……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 줍니다.

그런데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 주니까 즉시항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그런데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습니다, 위헌 운운하면서.

제가 심우정 찾아갔습니다, 검찰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이 거짓말쟁이. 즉시항고는 위헌이 아닌데. 즉시항고한 예가 얼마나 많은데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우정 사퇴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심우정은 검찰을 망가지게 한 또 하나의 핵심 장본인입니다. 윤석열 다음으로 검찰을 망가지게 한 핵심 장본인 심우정.

윤석열이 구속 취소돼서 나오면 즉시항고해서 윤석열을 다시 재구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을, 검사장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만장일치로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는 즉시항고해야 된다는 검사장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검사장들 전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검사장들 때문에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가 급물살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일 잘하는 검사님들께, 일 잘하는 수사관님들께……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을 했었는지, 어떤 불법들을 했는지. 즉시항고해야 될 그 시간에 검사장들이 모여서 전부 다 즉시항고를 하지 말자고 결의했으니 그 검사장들을 여러분은 원망하고 법적 조치하고 처벌하고 그들은 해임되고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지요, 어떻게 즉시항고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지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지요?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아주 당황하는 듯한 모습으로 검찰이 즉시항고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법원행정처장 참 웃깁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거기서 구속 취소하게 하는 것도 책임 못 지고 마치 자신은 정의로운 양 말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면 아주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은 구속 취소한 지귀연의 그 황당무계한 논리, 시간으로 구속 취소를 정하는 지귀연.

저희가 알아봤더니 지귀연이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답니다, 시간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다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다녔으면 그런 것 통제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독립을 운운하십니까?

독립을 현저히 어긴 대법원, 법원. 독립은 법원의 신뢰로부터, 독립은 국민이 법원을 믿는 그 신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시켜 놓고, 윤석열을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구속 취소시켜 놓고 국민들께 신뢰해 달라고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지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라서 어떻든 천천히, 여러 가지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봉권 돈다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 봐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건진이 누구입니까, 건진? 지금 건진만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더라, 처음에? 천공, 천공은 어디 갔습니까? 명태균 어디 갔습니까? 건진, 이것 뭡니까, 건진? 천공, 명태균, 건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재명 압수수색 몇 번 했을까요? 400번 정도 했지요. 경기도청에 가서 이재명 압수수색한다고 14박 15일 있었답니다, 2주 동안. 미친 거지요. 건진, 아주 화두가 되니까 건진 압수수색한다고 갔어요, 남부지검에서.

보통 이럴 때 압수수색을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얼마나 하나요? 건진은 얼마나 했을까요, 압수수색을?

(「압수수색 보통 하루 종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루 종일 합니까?

(「해 지기 전까지」 하는 의원 있음)

해질녘까지.

건진은 은신처라서 온갖 게 숨어 있어서 하루 종일 할 텐데 박범계 장관님, 이들이 건진 압수수색 얼마큼 했을까요? 7시 55분에 시작해서 9시 15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걸 봤어요. 7시 55분에 시작해서……

우리 보좌진 여러분께서 그것 혹시 찾을 수 있으면 그것 하나 찾아서 올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7시 55분에 시작해서 9시 15분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면서 거기서 가지고 나온 돈이 5만 원짜리 3300매, 1억 6500만 원.

우선 이렇게……

저기 있네요. 서울남부지검 12월 17일 오전 7시…… 어, 1분이 틀렸네, 55분인데. 54분부터 9시 13분까지.

(「밤 9시 아니에요? 아침 9시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하는 의원 있음)

오전 7시 54분이면…… 밤 9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21시」 하는 의원 있음)

21시라고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갖고 나온 게 5만 원권 묶음 3300장, 그렇지요? 이 5만 원권 묶음 3300장, 이렇게 비닐에 싸여 있는 돈뭉티기.

두 번째, 신한은행 띠에 묶여 있는 돈다발 그리고 고무줄에 묶여 있는 돈다발, 그래서 1억 65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획기적으로 난리가 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요,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이 돈다발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돈다발이. 중요한 것은 이 돈다발에……

이 돈다발 관봉권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관봉권에 잘 보면 2022년 5월 13일 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한국은행에서 5월 13일 날 찍혔으니까 그다음에 옮겨 간 거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압수해 간 남부지검과 이 사람들은 이런 돈이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2018년 돈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법사위에 사람들을 불러냈고 특검에도 가 봤더니 하는 말이 2018년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돈이라 추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비닐에 싸여 있는 돈은 추적을 못 합니까? 한국은행도 추적하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돈은 2022년 5월 13일 돈입니다. 저 정도의 돈이면 국정원에서 나왔든지 윤석열에서 나왔든지 김건희한테서 나왔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나오는 통일교에서 나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나왔을 텐데……

이런 돈 변호사 하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못 봤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재위라서 5억짜리 돈다발을 한 번 만져 본 적 있습니다. 조폐공사 갔더니 5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들어 보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무겁더라고요. 제가 조폐공사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은행에도 다 전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월 18일 돈이라고 하고 묻어 버렸습니다. 지검장 신응석 제가 읽어 보라 그랬습니다, 이 돈 몇 월 며칠 건지. 2022년 5월 22일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나온 검은돈입니다, 하얀 비닐에 싸여 있는 검은돈. 그런데 신응석, 2018년 돈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 다. 2022년이라고 스티커 안 보여 줬으면 이들은 그것을 다 묻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게 2022년 돈인지 누가 아느냐?'. 저희가 특검을 갔습니다. 특검에서도 2018년 돈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왜? 이 검사 애들이 2018년 돈이라고 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 스티커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스티커는 제보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022년 돈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돈이 2022년 돈인 줄은 수사하는 최선영 수사관 알고 있었고요, 이주연 알고 있었고요, 최재현 검사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법사위에 와서 현안 청문회 하는데 아주 건방지고 오만방자한 최재현 검사 보셨지요?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래 가면서. 그런 오만방자한 검사가 맨 마지막에는 '제가 22년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까?'라고 했더니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범인은 누구입니까? 최재현입니다. 스스로 '제가 책임질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검사들은 저 사람을 다른 데로 보냈고 책임도 안 지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 최재현이 이야기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한국은행에 물어봤더니 알 수 없다고 그런다고 한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돈을 알 수 없습니까? 이 돈은 바코드가 찍혀 있고 띠지가 있어서 한국은행이 어디로 줬는지, 이 돈이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갈 때는 백해룡 경정에 의하면 한국은행 관계자 또 청원경찰 등이 같이 시중은행으로 갖다 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이 돈을 받았으면, 누구인가에게 이 돈을 주려면 5000만 원이 그냥 나갈 텐데 이 돈이 갖고 있는 돈 그냥 줍니까? 주면서, 우리한테 있는 돈인데 이것을 통일교에다 줬으면 통일교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은행에 전화 다 해 봤어요, 새마을금고까지. 아니, 우리한테 있던 현금을 저쪽 사람이 갖고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을 기록을 안 합니까? 안 하면 내가 돈 잃어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니까 띠지도 떼 버렸고 스티커도 없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띠지와 스티커.

여러분, 제가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요. 비닐에 싸여 있습니다, 비닐에. 비닐에 싸여 있는데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이런 비닐에 싸여진 돈을 본 적 있습니까?

(◯박범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돈이 온 사람 손을 타겠습니까, 아니면 이 돈을 은행에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지문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지문과 이 돈을 받은 사람의 지문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 비닐에는 그 지문이 다 남아 있지 이 비닐에 서영교의 손도 타고 시중에 있는 시장 사람들의 손을 다 타겠습니까, 이 비닐에? 이 비닐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은행 사람들 또는 아니면 이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지문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없애려면 이 비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없애야지 되는 겁니다. 그 없애는 일을 하고 마치 돈을 세려면 없애야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없앴다는 것을 전혀 위아래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최재현이 이야기하고 있고 큰소리치던 그 자가 범인이었습니다.

혼자 했을까요? 이 비닐은 왜 없앴을까요? 건진이 갖고 있던 돈이었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명을 받아서 없앤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 검사가 이런 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 이 검사는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윤석열 보호하고 김건희 보호하고 어디로 오고 간 알선수재의 돈, 이 돈을 숨겨 주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죄는 특수 뭡니까? 공무집행방해입니까? 무슨 죄로 즉시 즉각 체포해야 된다는 게 백해룡 경정의 말이더라고요.

비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비닐을 없앤 겁니다. 띠보다 중요한 게 비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폐비닐로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 한번 수사반장으로 가 보실까요? 수사반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수사반장으로 가 보기 전에 하나 더, 아마테라스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되게 신기한 건 건진이 김건희와 윤석열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건진이 모든 공천을 다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 무슨 시장 공천, 무슨 시장 공천 그리고 모든 것에 연루되어 있어서 돈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 검사들이 가서 그 돈다발을 없애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없앤 것 같아요.

그런데 건진에게, 아까 말했듯이 아침 7시 55분에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해서 9시 13분에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하는데 제보에 의하면—제가 영화도 봤거든요—건진에게는 그리고 김건희는 일본 신전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건진 집을 남부지검이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는 못 찾아왔다가 특검이 압수수색하러 가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일본 신 아마테라스의 신전이 나왔습니다. 건진 은신처에 아마테라스의 신전이 나왔습니다. 아마테라스의 신전이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진은 뭡니까? 김건희는 뭡니까? 윤석열은 뭡니까? 일본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더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마테라스 신전, 제가 일본 신을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워 봤습니다. '아마 테라스일 거야' 이래서 '테라스'에다가 '아마' 붙여 갖고 아마테라스더라고요. 아니, 맨날 일본 신…… 우리는 듣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마 테라스일 거야' 이래서 아마테라스. 이게 건진 은신처에 법당으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뒤로 들어가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저자에게

수첩이 무엇이 있는지, 왔다 간 신도는 누구인지, 왔다 간 돈을 주고 간 사람은 누구인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 검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건진이 돈을 받았고 건진은 정거장이었다. 윤한홍에게 가는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 띠지 없어진 게 하도 놀라워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검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윤한홍 이야기. 윤한홍은 누구입니까? 찐윤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어떻든 그날 법사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찐윤 중의 또 한 분, 권성동 의원은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담당하고…… 잘 기록해 두십시오.

제가 일본과 관계된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테라스, 건진.

여기서 아까 제가 조금 유식하게 이 돈다발…… 박찬대 의원님께서 오셔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런 돈 본 적 있어요?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돈은 비닐에 싸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식한 말 하나 할게요. 에드몽 로카르, 프랑스의 셜록 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접촉한 두 물체 사이에는 반드시 물질교환이 일어난다. 이 비닐에 싸여 있는 관봉권을 손으로 만지면 두 물체 사이에 반드시 물질교환이 일어난답니다. 이것을 만지면 여기에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지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제가 5만 원짜리 하나 들었습니다. 이 5만 원짜리 정도는 너도나도 만져 봤겠지요. 지문이 여럿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건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문이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여기에? 다 해야 10개 정도 들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 비닐을 없애 버려야지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김건희에게서 왔는지 윤석열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정치인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통일에서 왔는지 아니면 신천지에서 왔는지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면 어떤 시장후보에게서 왔는지 이런 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기 위해 비닐을 없앤 거지요.

이제 수사반장으로 한번 가겠는데요.

지문이 가장 잘 남는 곳은 어디일까요? 유리. 유리 다음으로 잘 남는 곳이 비닐. 그래서 이 비닐이 없어진 겁니다.

그다음 유영철이라고 압니까, 유영철?

(「예」 하는 의원 있음)

유영철. 그 유영철은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사이코패스 그래 갖고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유영철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유영철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마가 있었는데 이 유영철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마를 잡아냅니다. 유영철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마를 잡아낼 때 어떻게 해서 잡아냈느냐?

유영철이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문 중에 다 남기는 지문이 있고요 그리고 남겼는데 조금만 남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쪽지문이라고 합니다, 쪽지문. 유영철에게 훼손된 지문, 피해자는 이게 날아가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 쪽지문이 남아 있는데 이 피해자의 살인범이 유영철이라고 하는 걸 잡아냅니다.

이 쪽지문은 어떻게 되냐면 지문이 남아 있는 곳을 진공에 넣어서 거기에 액체를 뿌립니다. 약물을 뿌리면 이 약물이 반응을 해서…… 쪽지문은 전체 다가 아니니까 누가 범인인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걔를 떼어서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문이 다 떼어서도 DNA를 채취할 수 있고 일부만 남아 있으면 그것을 떼어서 약물을 뿌려서 DNA를 채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쪽지문의 DNA를 채취했더니 이 살인범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살인범은 누구였다? 유영철이었다. 그래서 유영철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쪽지문을 통해서 유영철을 잡게 되는,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관람 오신 분들도 많은데…… 대한민국의 5만 원짜리가 1000장이 있는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조폐공사에서 오고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으로 가고 한국은행이 특별히 비닐을 칭칭 동여맨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서 시중에 내보내게 됩니다. 시중에 내보내기도 하고 국정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대통령실로 가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수사해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건진이라고 하는, 건진법사입니다, 김건희하고 아주 가까운. 윤석열의 등을 탁탁 치던 건진법사.

○의장 우원식 서영교 의원님, 잠깐만……

○서영교 의원 예.

○의장 우원식 오신 분들 소개 좀 하고요.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물 좀 드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실 소개로 충남 천안시 지역 주민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여당에서 낸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법안 심의를 하는데요 야당이,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를 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이 어제부터 진행되고, 여기 자리가 많이 빈 거는 의원들이 하루 종일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조별로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론하시지요.

○서영교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정부조직법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있는 정부조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기재부는, 돈을 거둬들이는 곳과 돈을 나눠 주는 곳이 같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돈은 거둬들였는데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소비쿠폰이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이라도 전국민지원금이라도 줘서 경제를 살리자라고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는 간이 작아서 돈을 못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쓸 곳을 먼저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 돈도 좀 주고 그리고 학생이 어려울 때는 학생도 좀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돈은 그렇게 쥐고 있다가 윤석열처럼 관저 만드는 데 쓰지 말고 윤석열처럼 엑스포, 사우디로 가서 엑스포 하는 데 몇천억 쓰고 와서 완패했잖아요. 그런 데 쓰지

말고 잘 쓰자. 그래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라고 잘 쓸 수 있게 하는 곳 하나 만들어 주고 재정기획부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자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좀 쓸 수 있게 하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이 준 세금이니까 국민에게 나눠 주자 이런 겁니다, 이자 붙여서. 그러면 국민이 힘들 때 그 돈을 받아서 살아나면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내면 세금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까? 우리는 돌아오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을 좋은 지도자는 국민에게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 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돈을 기재부처럼, '기재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기재부예요' 이런 말 안 나오게 잘 써 봅시다 이래서 정부조직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싫어, 필리버스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정부조직법,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검사…… 윤석열이 검사인데 자기가 수사도 다 해 버리고 그리고 묻을 건 묻고 칠 건 치고, 이재명 정적이니까 데려다가 수사해서 날려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기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언론장악은 언론장악대로 이렇게 하는 검사들이 있으니 이제 그러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검사가 수사는 손 떼, 떼고 기소에 집중해. 그리고 검사는 '난 수사하고 싶어' 이런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수사에 집중하고 수사관들과…… 그래서 국민이 '유영철도 잡아 줘' '마약이 들끓어. 마약사범 좀 잡아 줘'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빠르게 수사하자. 이렇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부분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둘로 나누자라고 하는 게 오늘 나온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오늘 그렇게 통과시키면,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안 하면 수사가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는데요. 검사는 기소만 하고 여기 있던 일 잘하던 검사, 수사관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훨씬 수사를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런 와중에 검사가 건진 집에 가서, 들이닥쳐서 압수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돈다발을 갖고 왔어요. 이 돈다발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5000만 원을 비닐에 칭칭 동여매 갖고 스티커까지 딱 붙여서 돈다발에 바코드도 찍고 '누가 발권했어'도 다 했는데 어머 세상에 이게 비닐은 뜯겨져 나가고 띠지는 다 없어지고, 없어진 겁니다.

이 돈은 2022년 5월 13일 날 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 발행된 건데 보고는 5월 18일 돈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검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김건희 잡으라고 했는데 건진 잡으러 갔다가 이 증거를 전부 다 지워 버리게 된 겁니다. 지워 버린 게 제보로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불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이 제일 중요한 건 지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은 함부로 만져 보지 않아서 주고받은 사람 지문이 몇 명으로 국한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특정될

까 봐 비닐까지 뜯어서 없애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검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수사관입니까, 여러분? 이 검사와 수사관 바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수사관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윤석열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누구 지시에 의한 건지 그들의 전화 내역, 통화기록 모두 다 까 보고 컴퓨터 기록 모두 다 까 보고 그리고 CCTV 다 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싹 다 벗겨진 그곳에 CCTV가 없답니다.

검찰들은 자기네가 잡고 싶은 사람은 죽어라고 잡고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어라고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증거까지 인멸하는 짓을 해 왔는데요. 제가 공부를 다 하니 지문은 비닐에 제일 잘 남는다, 그래서 그동안 비닐로 사람을 잡았다 이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중요한 건 관봉권·태완이.

여러분, 제가 태완이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태완이법이 뭐냐면요, 우리 태완이라고 하는 아기가 이렇게 어디가 얼굴인지도 모르겠어요. 6살짜리한테 누가 황산을 들이붓습니다, 입에다가. 아기가 50일을 앓다 죽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초동수사본부가 잘못했어요. 이 아기가 범인을 얘기합니다, 누구라고. 그런데 검찰하고 경찰은 초동수사본부가 잘못해서 그 범인을 놔줍니다. 그 범인이 말하는 알리바이에 넘어갑니다. 왜? 그 범인 신발에도 황산이 묻어 있고 다 묻어 있어서 그자가 범인인데, 아기가 그자가 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기가 죽어 가면서 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자가 '내가 그 아이 맨 처음 데리고 온 애잖아요' 이러면서 다…… 어떻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범인을 잡아 달라고 15년을 울부짖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 부모를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인을 잡지를 못해요. '법원에서 한 번 더 수사해라'라고 하는 재정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대구법원에, 대구지법에 대구고법에 대법원에 다 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범인을 잡는, 여섯 살짜리한테 누가 황산을 때려 부었는지 그 범인을 잡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수사가 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기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살인범은 15년이면 공소시효가 있어서 해방돼요. 그래서 이 아기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이라고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 버려서 살인범은 끝까지 쫓는다. 그래서 끝까지 쫓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더니 검찰에도 경찰에도 미제 살인사건 전담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구로구 호프집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가서 다시 보니까 그 호프 유리잔에 지문이 묻어 있는 거예요, 다도 아니고 조금만. 그러면 이게 쪽지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쪽지문은…… 그사이에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쪽지문에다가 약물을 뿌리고 그 쪽지문을 딱 뜨면 거기에서 DNA를 검출합니다. 그사이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 DNA를 전부 다 수거했어요. 그래서 이 쪽지문을 가지고 범인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비닐에 지문이 남아 있으면 이 돈이 누구한테서 어떻게 갔는

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것이 두려워서…… 비닐만 못 버리잖아요. 비닐, 관봉 스티커 다 버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사진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밝혀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화성 연쇄살인범 아시지요, 화성 연쇄살인범. 화성 연쇄살인범의 범인이라고 잡혀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을 끝내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또 미제 살인사건 전담반이 경기남부경찰청에 꾸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생 연쇄살인범을 이번에 잡아 보자라고 간 겁니다. 갔더니 거기에 이 증거물들이, 피해자들의 증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거물들에 범죄자의 DNA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증거물들이 비닐에 싸여 있었으면 이 증거물이 썩어 문드러졌을 텐데 종이에 싸여 있어서 증거물들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것을 다시 약물을 뿌려서 DNA를 떠서 수사를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과학수사가 발달돼서 그 DNA를 가진 애가 감옥에 있는 이춘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화성 연쇄살인범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범을 잡았고 원래 있었던 누구는, 그 범죄자는 풀려나게 된 거지요. 그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잡았던 이 세상, 그러면서 계속 개혁은 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성 연쇄살인범을 잡았고 억울했던 사람은 풀어 줬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2015년인가 16년인가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범은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있을 때니까 언제냐면 2021년 얘기입니다, 2021년. 지금은 2025년이에요. 2025년에 이렇게 비닐에 지문이 있으면 이 돈다발 누구 건지 다 찾아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한테서 왔는지, 아니면 윤석열한테서 왔는지, 아니면 어느 검사가 청탁했는지 이런 게 두려워서 비닐을 뜯어 버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아니,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면 이런 것을 왜 뜯습니까? 뜯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검사가 그런 나쁜 짓을 했고 그 내용이 어떻든 그들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왜 뜯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검사가 할 말입니까? 수사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닐 쳐져 있는 것 5000만 원 그리고 신한은행 띠로 있는 것 그리고 고무줄로 있는 것 이렇게 딱 나눠서 3개를 포스트잇 딱 붙여 가지고 압수계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고에 넣어 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고를 열어 보니 비닐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검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와서는 다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최재현 검사라는 작자는 이게 2022년 5월 13일 날 나온 돈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2018년 돈인 것처럼 하고 끝냅니다. 2022년 5월 달 돈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보다 더한 범죄집단인 거지요.

우리는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검사집단들을 보았는데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와 연루되어 있는 그 조직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겠다고 공작에 들어가 있는 그 검사집단들을 저희가 법사위에서 찾아내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필리버스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태완이법이 오늘 같은 날도 또 새로운 범인을 거대하게 잡아낼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아이는 태완이입니다, 태완이.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 간 아이의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눈 높고 고귀한 법원은 1심도 2심도 3심도 기각시켜 버렸던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간절히 부탁했었습니다, 이 범인은 잡아야지 세상이 정의로운 거라고. 그런데 그냥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번에 이 관봉권의 비닐과 띠지와 돈다발을 숨겨 주고 범인을 숨겨 준 이 검사들 확실히 처벌하고 그리고 범인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검사는 수사해서는 안 된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서영교가 더 잘 챙겨 나가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더 잘 챙겨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나온 얘기는 그겁니다. 이거는 2020년 ‘장롱 시신 피의자, 비닐에서 지문 검출, 결정적 증거’, 비닐에서 지문 검출해 갖고 살인범 잡는데…… ‘전국 코인노래방서 1400만 원 절도, 봉투에 남은 지문에서 덜미’. 대한민국이 과학수사가 엄청 발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문 감식은 경찰에 있고요 DNA 감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DNA 감식은 검찰에 있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문에 약품을 뿌려서 그 약품을 뜨면 DNA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비닐을 뜯어서 없애 버리고 왔으니 나쁜 사람이지요.

‘깨진 맥주병에 남은 쪽지문, 15년 만에 덜미 잡힌 범인’, 여기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태완이의 선물’ 이거는 2017년 기사인데요. ‘태완이의 선물, 쪽지문으로 15년 전 살인범 잡았다’, ‘깨진 맥주병 조각에 있는 3분의 1짜리 쪽지문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당시엔 불가능했던 지문 조각 분석이 최신 수사기법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시행 이후 재수사를 통해 해결된 장기미제사건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황산테러로 끔찍하게 살해된 여섯 살 태완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선물입니다’. TV조선 보도네요.

서영교가 만든 법입니다, 태완이법.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던 법입니다, 태완이법. 이 태완이법이 남기고 간 선물입니다. 이제 화성 연쇄살인범도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경찰들이 수사 잘합니다. 검찰보다 수사 잘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잘하는 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중요한 조직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사가 잘되고 훨씬 더 범인 잡는 일은 빨라질 것입니다.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검사가 다시 보던 것을 이제 국수본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니 수사는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기소되고, 근거도 없이 함부로 고발되고 함부로 고소된 것은, 근거 없는 것들은 빠르게 기각시켜 버리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정의로운, 좀 더 수사 능력이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지 않으십니까? 마약범죄 어마어마하게 당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스미싱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버가 외국에 있다며 보이스피싱범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약범죄는 누군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에는. 그래서 잡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저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범들을 조직적으로 잡아 오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발로 뛰지 않겠습니까? 마약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거대하게 대규모 부패한 사건, 대량 범죄사건 모두 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훨씬 잘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주 중요하게 잘 만들어진 정부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관봉권을 누가 어떻게 없앴는지라고 할 때 백해룡 경정이 나왔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발언을 한번 같이 청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음성이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관봉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백해룡 경정의 이야기입니다. '저 관봉권이 비닐로 포장돼 있으면 이게 벽돌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을 이대로 챔버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챔버라고 하는 공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본드법이라고 있습니다. 가스를 태워서 지문에 접착되게 해서 그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검은색 분말을 발라 가지고 지문을 채취하거든요. 챔버에서 과학수사해 가지고 지문을 따 가지고 경찰에 보내요. 경찰청에 보내면 과학수사계에서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진 다 찍고 지문을 건네줍니다. 이건 기초수사예요. 이걸 만약에 안 했으면, 건진이 민간인이잖아요. 건진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붙는 죄가 있습니다. 형제처럼 붙는 죄가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선수재가 붙었을 거고요. 알선수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이것 수사 안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관봉권 띠지 관련해 가지고요, 대검 과학수사팀의 챔버에 넣어 가지고 본드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상적인 지문이 잘 안 나오는 것을 쪽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지문은 단백질 분비물이에요. 거기에 반응하는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쪽지문이 나오면 화학물질들이 잘 안 붙기 때문에 그 쪽지문은 단백질 미세한 걸 긁어 가지고 DNA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 DNA 데이터베이스는 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검에 부탁해야 돼요. 지문은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는데 DNA는 대검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국과수에 맡겨 놓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범인이 검거되면 그것을 가지고 대조를 하지요. 그러면 100% 맞아떨어집니다. 박건욱 부장검사, 최재현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로 입건해야 됩니다, 당장. 국회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돈을 숨기기 위해서 검찰이 움직였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 처벌해야겠지요? 이것 처벌해야겠지요?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것 처벌하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돈이 누구한테서 왔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것 알 수 있는 증거물 비닐을 떼어 버리고 띠지를 떼어 버리고 폐기해 버린 이 검사와 수사

관들 아주 중한 죄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사관이. '원형보존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4조와 11조를 위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사관이요 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원형보존이라고 하면 그걸 돈을 세는 걸 원형보존이라고 하나요? 이 수사관보다 앞에 있던 최선영이라고 하는 수사관이 이렇게 돈다발로 돼 있는 건 돈다발 그대로 셀 필요가 없습니다, 5000만 원이라고 은행에서 나온 거니까요 이걸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스티커 딱 붙여 주고. 신한은행에서 나온 돈은 그것대로 띠가 있으니 띠를 채운 채로 세었고 고무줄로 돼 있는 건 고무줄을 채운 채로 세어서 고스란히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들이 원형보존이라고 하는 건 이것을 다 떼서 세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규칙에 있다면서 말이지요.

저는 대한민국의 수사관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규칙, 압수물사무규칙 제4조와 11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압수물사무규칙 제4조와 11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4조에는 원형을 보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와 11조 어디에도 세야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현금은 원형을 보존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에도 현금을 세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4조와 11조 사무규칙에 돈다발은 비닐을 뜯어서 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자기는 그 돈다발을 못 봤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셌다고 하면서 기억은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옳지 않습니다. 저는 사무관은 아주 뛰어난 줄 알았습니다. 검사는 가장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윗사람의 말들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윤석열처럼 김건희처럼 심우정처럼 최재현처럼 신응석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숨기고 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검사들이 없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그런 검사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건진법사 은신처를…… 12월 17일 오전 7시 54분부터 9시 13분까지, 전부 다 놀랐어요. 1시간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이렇지요? 그래서 저녁 9시 아니냐 이랬는데 이 밑에 보면 오후는 이렇게 오후라고 써 있습니다, 오후 3시 50분쯤. 이건 오전 9시네요. 오후 3시 50분쯤에 남부지검 압수계에서 이것 확인하잖아요. 확인하는 걸 보면 아침에 1시간 정도밖에 압수수색 안 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러고 압수수색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그러고서는 수사 잘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며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라며 마이크를 이렇게 제쳐 놓은 자가 국회에 나와서 있었던 최재현 검사입니다. 마지막 돌아갈 때는 '제 책임입니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자기가 책임자라고 하고 갔습니다. 자기가 책임자지요. 책임을 안 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건진입니다, 이 사람.

아까 3시 50분경, 당일 3시 50분경 아침 1시간 정도 압수수색하고 당일 3시 50분경에 이 돈다발을 여기다 놓고요, 요게 아까 벽돌처럼 만들어져 있는 5000만 원짜리 비닐에 싸여 있는 돈다발입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건진이 사인합니다. '저 이렇게 이렇게 압수당했어요'라고 사인합니다. 이렇게 사인해서, 건진이 이렇게 다 사인한 사진이 있는데 이 압수물을, 이 돈다발을,

이 비닐을 다 풀어헤쳤다는 겁니다. 돈다발을 풀어헤쳤다는 이유는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그 검사나 수사관들이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입을 다 맞추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입을 맞추고 나와서 이렇게 답안지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법사위에 와서 얘기하면서 '남들 다 폐기해. 이 ㅂㅅ들아'라고 욕까지 적습니다. 이건 누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 수사관이 '남들 다 폐기해. 이 ㅂㅅ들아', 이건 뒤에서 누가 봐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폐기했냐?' 이러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로 말을 맞춰 갖고 나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들이 왜 이래요?

국회가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저희 법사위에 같이 계실 때 했던 일인데, 현안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법에 현안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안 청문회를 했고 그 현안 청문회에서 증인을 부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증인을 부르면서 이걸 묻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국회법에 현안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안 청문회를 뭐뭐 했었냐면요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현안 청문회 했습니다.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금 같이 계신데, 그렇지요?

(○전현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의원님 파이팅!)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현안 청문회를 했는데 김계환이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다라고 박정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그 두 사람을 대질시킵니다. 그러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박정훈을 항명수괴죄라고 기소를 합니다, 그 김동혁이라고 하는 검찰단장이. 저희가 김동혁을 불러다가 박정훈 대령하고 대질을 시켰습니다. 김동혁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서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합니다, 저 이야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윤석열의 격노, 800-7070으로 온 전화는 윤석열에게서 온 거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고 윤석열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현안 청문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현안 청문회 그리고 김영철 검사, 박상용 검사 등 검사들의 수사 외압, 조작, 왜곡, 회유, 진술세미나 등 관련한 탄핵 청문회.

그리고 조희대, 말도 안 되는 파기환송. 이틀 만에 표결에 부치는 사법 쿠데타 의혹의 파기환송 현안청문회 이런 걸 하면서 서서히 꼬리가 잡혔고 명태균 관련한 강혜경 씨를 국정감사의 첫 증인으로 저희가 오게 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를 갖다줬다, 그리고 돈을 받아 오라고 했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받아 오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 왔다고 한다, 그리고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한다, 500만 원 딸아이 주라고 했다며 이런 등등의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리고 명태균과 모두가 주고받았던 녹취, 카톡 등이 온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안절부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을 감옥에 넣지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속시켜? 그

러면 한 달 만에 탄핵될 텐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법사위하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했던 작업으로 이렇게까지 왔고.

이번에는 관봉권 띠지 폐기 관련 현안 청문회, 박상용 검사의 이재명을 엮기 위한 KH 그룹의 진술 회유 등 관련한 현안 청문회—수원지검입니다—그리고 마약사건 관련한 현안 청문회 등을 하면서 온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가 이렇게 일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희대, 지귀연…… 지귀연은 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주었는지, 조희대는 왜 그런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지귀연이 룸살롱인지 단란주점인지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진 등 관련해서 왜 지귀연을 그대로 두는지…… 교체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런 일 있으면 크게 책임을 집니다. 검사들도 책임집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는 그대로 두지요?

그리고 조희대는, 가장 정의로워야 될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윤석열의 친구.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바로 해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해내는 그 일들을 하면서 윤석열과 한덕수와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대법관들하고 전부 다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니라면 나와서 당당히 이야기해야지요. 정당하지 못할 때, 검찰이 문제가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이 제대로 안 될 때, 재판이 정의롭지 못할 때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고 국회에서 현안 청문회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지 분실, 담당 검사 인지 후 대검 수사까지 225일. 그 돈다발의 띠지가 없어졌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수사하게 된 게 25년 8월 21일입니다. 우리가 현안 청문회를 언제 했더라……

제가 잠깐 검토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2월 17일에 건진법사 전성배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1시간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했는데 25년 1월 9일 띠지가 없어졌다는 것을 추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2월 3일 최재현은 다른 천안지청으로 이동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게 묻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JTBC가 4월 23일 이 사진을, 아까 관봉권 사진을 제보받아서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박건욱 그리고 신응석 지검장까지 보고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8월 18일…… 그러고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4월 25일까지. 그러니까 8월 18일에 KBS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8월 19일 날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까지는 누구 정권입니까? 윤석열. 우리 정권이 되기 전이에요. 저들은 저거를 다 듣고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저게 8월 18일 날, 이재명 정부 6월 3일 날 되고 KBS가 저게 뭐지 하고 가게 되는 거지요. JTBC에서 보도가 나와도 저들은, 검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8월 19일 날 감찰을 지시하는데요. 저하고 김용민 의원이 8월 22일 날 특검에 갑니다, 저희들이. 8월 22일 날 특검에 가서 저거 수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8월 22일 날 특검에 가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특검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돈이 2018년 돈인 줄 압니다, 특검도. 왜? 저들이 특검이나 이런 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018년 돈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돈은 2018년 돈이 아니라 2022년 5월 13일의 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것을 다 묻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수사해야 합니다. 행안부장관께 꼭 수사를 요청합니다. 감찰로 안 됩니다. 감찰은 수사관 두 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맙니다. 최재현 검사가 저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최재현 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이 2022년 5월 13일 돈인지 아느냐라고 물으니 자기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응석 검사장은 몰랐다는 겁니다. 왜? 최재현이 2022년 5월 13일 이후 것이라는 것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최재현만 저것을 알고 묻어 버린 겁니다.

그 검사가 바로 이 검사입니다. 아주 수사를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다가 건진의 핸드폰에서 목걸이 같은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건진을 구속영장을 두 번 쳤는데요 두 번 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구속영장입니까? 그리고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했더니 저렇게 마이크를 올리고, 아주 도도하기 짝이 없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는 국민을 모시는 곳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뽑아 주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뽑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검사와 판사는 임명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임명되는 사람들은 독립을 지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임명된 사람들이 제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청문회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라고 국회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입니다. 저런 일들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으면 수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 들어와 법무부장관께서 감찰을 지시하고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검사가 수사한다면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는 공수처, 국수본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저것을 보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국민 10명 중의 7명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아니, 상식 아닙니까, 상식? 수사반장에서 우리 안 배웠습니까? 그 옛날 수사반장을 넘어서서 기본 아닙니까? 70%가 의도적으로 폐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폐기했다고 하는 부분을 알고 검찰을……

그래서 이것과 이어서 또 물어보게 된 겁니다. 국민 10명 중의 8명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 8명. ‘연내 당장해야 된다’가 52.8, ARS는 58, ‘시간을 갖고 시행해야 된다’가 30.6, 다 합치니까 10명 중의 8명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는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의장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의장 우원식 예, 그러세요.

○서영교 의원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약입니다, 마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약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 그 전에 마약 했던 사람인데 왜 이제야 잡히지?'. 추적을 하다 보니 대한민국 인천지검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마약이 2200억 원어치입니다.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겁니다. 마약이 나무도마에도 오고 사람 몸에 칭칭 감겨서도 오고요.

제가 추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기재위원인데 인천에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특별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특별한 비행기는 특별하게 검색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검색대를 지나가는데 몸에 마약을 칭칭 감은 사람들이 검색대 밖으로 나갑니다, 누군가 안내를 받아서. 그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도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검색대를 통하지 않고 나가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검거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검거해 가면서 추적한 사람이 백해룡 경정입니다. 잘했잖아요, 잘했잖아요. 2200억 원어치를 했으니 잘했잖아요.

그런데 조사하던 중에 이 백해룡 경정이, 수사팀이 해체되고 경찰서장이 용산의 눈치를 보고 서울청에서 용산에서 관심 있다고 하고 그러더니 백해룡 경정은 수사팀이 아니라 저기 강서의 강서지구대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알고 보니 인천세관에서 묻히고 있었던 겁니다. 인천지검의 지검장은 심우정이었습니다. 그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옵니다. 검찰총장으로 와서 이 심우정이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하는 사람들을 또 해체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맨 처음 말레이시아 조직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게 23년 2월 5일 인천지검에서 조직원 중 1명을 체포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심우정 지검장이 이끄는 인천지검에서 덮게 됩니다. 1명 검거했는데, 3명이 똑같이 몸에 4㎏씩 마약을 맨 채 공항을 통과해서 국내에 유통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안전하게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합니다.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열두 차례 통과했다는 이 표를 검찰은 이미 그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검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열두 차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검거하지 않았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인천지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을 수사했다는 걸 몰랐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을 수사해서 덮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백해룡 경정이 수사하기 전에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을 수사하고 덮었다는 겁니다.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6부에서 백해룡 경정과 호흡을 맞춰 가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고 백해룡 경정 등이 26명 검거를 하고 14명을 구속시켰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영장을 신청하면 남부지검 특수부가 바로 영장을 청구해 줬고 약 40개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직원을 대거 검거하고 마약을 압수할 수 있었는데 세관이, 인천세관이 연루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나오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6부를 폭파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지검, 23년 2월 27일 남부지검. 검찰은 이런 마약의 실체를, 조직을 알고 있는데 수사를 일부만 한다든지 검거를 일부만 한다든지, 백해룡 경찰이 아주 의욕 있게 수사를 많이 하니까 해체해 버리고 이 마약 조직을, 백해룡 경정을 강서지구대로 보내고. 너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마약에는 또 누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살펴보았더니 인천세관으로는 몸에 칭칭 동여맨 마약 운반자들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검색대 밖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김해 등에서는 나무도마에 마약을 넣어 갖고 옵니다. 나무도마가 그냥 지역에서 사면 몇천 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만 원씩 해서 대한민국이 수입을 합니다. 왜? 그 안에 마약을 넣었기 때문이지요. 도마 속을 파고 그 속에다가 저렇게 하얀 마약을 넣은 것입니다.

저 도마의 마약은 검색 엑스레이를 통하면 전부 다 검거되지 않습니까? 마약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검색 엑스레이에 마약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약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두 번째는 저 마약은 마약견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약견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마약견도 투입하지 않고 검색 엑스레이도 그냥 통과해 버리고 사람들은 기본 검색대도 통과해 버리고.

제가 기재위를 했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인천세관은 기재위였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인천세관이 기재위 소관입니다. 제가 그래서 당시에 인천세관을 불렀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약 검색대 예산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아니, 어떻게 검색대를, 그것도 말레이시아에서 온 그 말레이시아항공이면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원님, 검색대가 5개였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그래서 위원님께 검색대 예산을 더 요청했고 위원님께서 검색대 예산을 저희들에게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검색대 예산을 마련해 주고 검색 잘하고 마약 잘 잡으라고 했지만 그 검색은 그 전에 5개가 있어서 다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천세관이 연루되어 있다고 인천세관을 잡으러 갔더니 인천세관에서는 그때 그 마약을 칭칭 동여매고 온 사람들을 검색대 밖으로 데리고 나간 자가 있는데 그자가 그때 출근을 안 했다는 둥 하면서 전체를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세관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인천세관 관련한 내용을 인천지검장인 심우정이 알텐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1명만 체포했을까요? 백해룡에게 다 체포되었는데 말이지요. 백해룡이 체포하고 나니까 인천지검에서 살아 나왔던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외친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은 마약과의 전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이 마약 뭘 잡아냈지요? 한동훈과 윤석열이 마약을 뭘 잡아냈지요? 이태원 사건 때 마약을 잡는다며 마약은 하나도 못 잡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말레이시아 조직원은 왜 보호가 되고 있지요? 말레이시아에서 100㎏를 가지고 있다는 마약, 백해룡 경정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약은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새로운 통치 자금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모두 수사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마약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마약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용산에서 백해룡 경정이 수사하는 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백해룡 경정과 함께 수사를 하던 영등포경찰서장은 백해룡 경정의 수사를 중지시키고 용산 대통령실로 승진했다. 그렇다면 용산 대통령실의 주인은 당시에 윤석열이다. 그리고 김건희다.

조병노라고 하는 자가 인천세관이, 영등포에서 수사하는 것을 보도자료 내는 것을 중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인천세관이 요청한다며 조병노가 부탁을 합니다. 조병노는, 이종호가 승진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자가 조병노입니다. 조병노와 이종호. 영등포경찰서장이 된, 서장에서 승진한 영등포경찰서장, 이종호와 관련이 있는 자 김건희,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자 윤석열, 말레이시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김건희 오빠 김진우, 이렇게 저는 문제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남부지검에서 지금 임은정 지검장 등이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마약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검사입니다,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사진 좀 띄워 봐 주십시오.

(○서범수 의원 단하에서 — 법사위에서 고생하십니다. 몇 시까지 할 건데요?)

다음이에요? 저희 그냥 할 거 같은데……

(○서범수 의원 단하에서 — 끝낼 거예요, 다? 6시 반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시구나. 앞에서 17시간인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박상용 검사입니다. 눈빛 끝내주지요, 박상용 검사?

'박상용 태도 논란…… 전우용, 괴물들이 법 다뤄선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 한번 봐 보십시오.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입니다, 박상용.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며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은 아무것도 없고요 쌍방울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쫙 자리를 똬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에게 돈을 대 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고 쌍방울 고문변호사, 이사 등의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 버리자 쌍방울은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안부수 등을 엮어 가며 이재명 엮기 작업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야기합니다, '박상용 등 검사실에 불려 갔습니다. 불려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진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하고…… 여기에서 문제는 그겁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쌍방울과 아무 관계 없는 것이 드러나자 쌍방울을 수사

하는 와중에 쌍방울에 있는 검사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에 있는 검사들을 통해서 압수수색 온다는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성태는 도망을 갔나 아니면 안 들어왔나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 정보를 벌써 쌍방울에 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흘려 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 둔갑을 해서 쌍방울 부정부패·비리로 김성태를 적색수배해서 끌어들이고 이화영을 엮고 방용철과 안부수를 엮어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방북 비용 대납을 쌍방울이 했다 이렇게 엮어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박상용 검사는 이런 기획을 할 수가 있지요? 박상용이 했을까요, 윤석열이 했을까요? 박상용이 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윤석열과 같이 함께 있던 그 검사들이 했을까요? 이것 모두 낱낱이 살펴야 합니다. 박상용이 그 당시에 누구와 어떻게 통화하고 있었는지 통화 내역 그리고 녹취 내역 그리고 이동 내역 모두 다 살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는…… 박상용 검사실에 66회 불려 갑니다. 다른 검사실까지는 111회 불려 갑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다른 검사실까지 139회 이렇게 불려 다닙니다. 기소되고 난 다음에 말이지요. 기소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려 다닙니다. 이렇게 불려 다니면서 같이 박상용 검사실에는 66회, 92회, 89회, 27회 이렇게 불려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화영 의원의 약점을 잡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약점을 잡아서 아들을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불러다 주겠다고 하고 부인도 피의자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그런 적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들과 부인 그리고 이화영 의원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박상용 검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박상용의 진술 세미나 의혹, 회유 의혹 그리고 조작 의혹 이것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이화영 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방에 불려 가면서 어느 날은 연어를 먹고 어느 날은 술도 한잔하고 어느 날은 육회도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와 검사실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수원구치소에서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 그리고 안부수의 출정 기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5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들이 같은 날 검사실에 간 것은 스물다섯 번이나 됩니다, 스물다섯 번.

국민 여러분, 공범을 같은 검사실로 부를 수 있을까요? 같은 검사실로 부르면 대질입니다, 대질. 대질을 하면 무조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사일지를 써야 하는데 조사일지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집중 소환, 월·화·수·목·금 똑같이 계속 불러냅니다.

원래 같은 공범이라고 하면 같이 차를 태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차도 같이 태우면 안 되는데 같은 방에 같이 불러다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같이 들여보냅니다. 이러고서는 연어도 먹이고 술도 먹고……

그리고 김성태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의 약점을 잡아서 말을 만들고 '우리는 다 얘기 끝났으니까 이화영 의원만 얘기 맞춰 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누구를 엮어 넣는

겁니까? 이재명을 엮어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요일 날 불러냈느냐…… 여러분, 일요일은 불러내지 않습니다. 구치소에서도 다 쉬는 날이라 검사실에서 불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구치소도 안 되지만 검사실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요일 날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의원이 다른 날 변호인 접견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뭔 개뼈다귀 같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불러냅니다, 부처님 오신 날. 3명을 같이 불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3명이 다 부처님 오신 날 불러내 달라고 하던가?'라고 물었더니 박상용은 답변을 못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이렇게 다 불러다 놓고 초밥도 먹이고 육회도 먹이고 술도 먹였어요. 이 내용이 같이 출정했던 교도관들, 계도 교도관들 일정표에 적혀 있답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면 교도관들이 처벌받으니까. 처벌받아서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강요하니까 할 수 없이 알리바이를 맞춰 놓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3명이 같이, 김성태·방용철·이화영이 같이 갑니다.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라고 했더니 애월연어에서 연어를 샀더라고요. 연어를 샀는데 그 카드가 4만 9100원입니다, 연어값 내역이. 4만 9100원, 우리가 카드 찾아 가지고 찾아냈어요.

'왜 애월연어인가?'라고 봤습니다. 애월연어는 5만 2000원짜리 연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사를 해서 할인했습니다, 5만 원으로. 5만 원으로 할인하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수원구치소까지 그것을 사 갖고 가야 하니 차를 가지고 왔더니 1000원을 깎아 줍니다, 주차 비용이라고. 그리고 4만 9100원인데 100원은 뭐냐? 봉투에 넣어 가라고 봉투값이라고 합니다, 4만 9100원. 이게 쌍방울 관계자의 카드 내역서에 나온 돈, 카드 내역이고 이것은 애월연어에서 샀고, 이 애월연어는 수원지검에서 차량으로 1분 걸리는 지역이고,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방용철·김성태·이화영을 불러서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아니기는 뭘 아닙니까, 다 나왔는데. 현재 법무부가 다 조사했는데.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아니라고 하다가 저에게 딱 걸린 거지요.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3명이 같이 나왔느냐? 같이 내보내 달라고 했느냐?' 여기서 말 딱 못 했습니다. 3명을 검사가 불러냈으니 나오지 그 3명이 부처님 오신 날 같이 나오게 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번은 도시락 17인분이 들어가고 한 번은 25인분이 들어가고 한 번은 68인분이 들어간답니다. 왜 이렇게 점점 많아졌을까요? 처음에는 검사하고 관계자만 그다음에는 검사실의 다른 사람까지, 68인분일 때는 교도관들까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이것은 영화…… 참 나, 허구에나 나올 이야기 아닙니까? 허구에나 나올 이야기 아닙니까?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 줬다라고 하는 것을 엮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을 데려다가 진술 세미나 했고 강요했고 협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변호사를 압수수색해 버립니다. 대한민국에 수사하다가 변호사 압수수색하는 검사 있습니까? 박상용 검사, 이화영 등을 수사하다가 이화영의 변호사

를 압수수색합니다. 이 변호사가 아주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그만둡니다.

그 박상용 검사를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 드리며…… 박상용 검사 혼자 했을까요? 다른 검사들 같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위에서 지시한 사람 없을까요? 윤석열이 이재명 잡으라고, 김성태 등 잡아서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육회비빔밥입니다. 쌍방울에 있는 그 사람들의 카드 내역서에 30만 9000원이 나옵니다, 30만 9000원. 뭉티기라고 하는 육회비빔밥, 가서 뭉티기 3개, 육회 2개, 육회비빔밥 7개 하니까 딱 30만 9000원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숨겨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카드 내역서에 나온 겁니다.

카드 내역서는 어떻게 구합니까? 변호사가 사실조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안 해 주는 거예요. 특정한 날을 특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특정해 그나마 받아 냈는데 딱 이렇게 증거가 나와 버린 거지요.

검사의 이야기를 하고 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일요일 날 불러내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일요일입니다. 김성태·방용철·이화영 1시 11분에 구치소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11시 1분에 복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313호는 박상용의 검사실입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다 같이 불러냅니까?

그리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질신문하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손에 왔으리라고 박상용은 생각 못 한 겁니다. 박상용의 검사로서의 부정함, 검사로서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 검사들은 왜 누군가를 억지로 수사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해서 그 사람을 기소해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이제 검사들은 그런 일을 손 떼야 합니다. 기소 중심으로 하시고 수사를 하고 싶으면 수사 중심으로 하시고,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검사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일 잘하는 검사님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렇게 몇몇의 정치 검사, 공작 검사 모두 지적하고 처벌할 것을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 촉구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하면서……

이것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씁니다. '일요일 등 식사를 배달하여 먹어야 할 때에는', 일요일 날 불렀을 때 특히 그래서 이렇게 사 오는 게 많은 모양입니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사들고 오는 것 같았다. 육회비빔밥, 연어 요리 등을 먹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하자고 얘기했다'. 그 일요일이 바로 이 일요일인 것이라는 거지요, 6월 18일 일요일.

6월 18일 일요일에는 카드 내역서가……

아, 이거네요. 6월 18일 일요일에, 6월 18일 일요일 김성태·방용철·이화영이 1시에 갔다가 11시에 들어옵니다. 이럴 때 일요일이니까 밖에서 물건을 사 왔다는 거지요. 이 물건을 사 온 내역을 저희가 찾아보니 이렇게 카드 내역이 있었습니다.

23년 6월 18일 일요일, 환이네뭉티기에서 이것은 뭉티기, 이것은 육회, 이것은 회비빔밥, 30만 9000원. 수원지검에서 차량으로 6분 걸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한 날들은 쌍방울 직원의 카드 내역서에 이게 나와 버렸습니다. 없는 죄를 만드는 박상용과 그 검사들도 문제지만 이것을 다 찾아내는 변호사와 이화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서도 이 초밥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찾아서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이네뭉티기 육회 13만 5000원짜리, 13만 5000원짜리를 몇 개 샀다고 돼 있나? 뭉티기가 13만 5000원짜리 3개 그리고 육회 9만 원짜리 2개, 육회비빔밥 7개 그러면 30만 9000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걸 검사실로 갖고 와서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었다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 내용은 이번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계속 가는 거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2023년 5월 집중소환.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월·화·수 계속 가네요, 3명이 똑같이. 5월 25일 목요일, 5월 26일 금요일, 5월 29일 월요일 그리고 5월 31일 수요일. 월·화·수·목·금 계속 불러대네요. 김성태·방용철·이화영, 김성태·방용철·이화영, 세 사람을. 이렇게 하니 이게 맞습니까? 이건 무언가 짜고 조작하려고 했던 일인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 화면에 있듯이 월·화·수·목·금·월·수 이렇게 셋을 다 불러다가…… 이런 것 보셨습니까? 이런 수사 보셨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월 29일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이날도 3명을 같이 부릅니다. 이날도 3명을 같이 부르는데 그날은 연어가 4만 9100원. 왜 그런가 했더니 세일행사해서 5만 원. 연어 한 판 가격 5만 원, 주차할인 1000원, 비닐봉투 100원, 4만 9100원입니다. 이때는 대체휴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김성태·이화영·방용철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일요일 날 왜 불렀냐 그랬더니 이화영 의원이 평일에 변호인 접견이 있어서 일요일에 불러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3명이 다 변호인 접견이 있다고 일요일에 불러 달라고 합니까? 부처님 오신 날도 3명이 다 불러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변호인 때문에 일요일 날 불러 달라고 했다고 해 놓고 이렇게 다른 날, 월·화·수·목·금·월·일·월 이렇게 다 불렀잖아요. 월·화·수·목·금, 부처님 오신 날(월)·일, 다 부릅니다. 평일도 다 불러 놓고, 일요일 날 왜 불렀느냐 물으니 평일에 변호사 접견이 있어서 일요일 날 불러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기소 중심으로 하자. 왜? 수사해서 자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수사해 놓고 사실이 아닌데 내가 수사했으니 기소시키고 싶어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같이 되어 있으니 수사도 무리하게 하고 기소도 무리하게 하고 그래서 모두 다 범죄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날 아니겠습니까?

5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출정을 스물다섯 번이나 합니다, 스물다섯 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불러다가 아이를 구속시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잘해 줄 때는 아이를 생일 파티해 주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구속시키겠다고 하고.

법무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 결과가 나온 결과 술도 있었고 외부 음식도 있었고 수도 없이 불러 댔고, 이런 내용이 감찰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께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할 것을 법무부장관께 촉구합니다.

검사들의 문제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장시호라고 말입니다, 장시호. 장시호라고 있었는데요.

이 검사도 저희가 탄핵청문회를 해 봤었는데요. 이제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으니 검사들의 잘못된 것은, 영화처럼 잘못된 것은 이제 전부 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호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장시호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그렇게 이화영 의원을 계속 불러내서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의 진술 세미나를 시켰는데요, 김영철은 장시호를 그렇게 불러냅니다. 이런 건 있어선 안 되는 일이거든요. 꼭 탄핵해야 합니다.

장시호를 일요일만 스물한 번 불러냅니다, 일요일만. 일요일만 스물한 번 불러내고요 토요일만 열한 번 불러냅니다. 여기서 장시호는 여자입니다. 설 연휴 3일간 불러냅니다. 크리스마스 날 불러냅니다. 아니, 아무리 피의자라지만 월화수목금토가 있을 텐데 일요일 스물한 번 불러내는 게 말이 됩니까? 토요일 열한 번 불러내고 설 연휴 3일 동안, 검사실에 설 연휴에 다른 검사들이 나올까요? 설 연휴에 다른 수사관들이 나옵니까? 검사가 아무리 검사라지만 설 연휴에 나오게 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오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장시호를 검찰에 3일간 불러냅니다, 3일간, 휴가 기간 3일간. 왜 불러낼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도 불러냅니다. 검찰이 왜 이러는 겁니까? 이 검사는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자료를 보면요 평일에 안 부릅니다. 여기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끝내주지 않습니까? 1112호, 설 연휴 3일간.

강준현 의원님, 설 연휴에 국회에 옵니까, 아니면 집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사실은 제보를 받은 거지요. 장시호가 김영철에게 '오빠 검사' 이렇게 해요, 오빠.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줬어. 다른 사건 때문에 여쭐 말이 있대. 우리 집 일은 다 사임했어. 걍 모른 척……', 'ㅇㅋ'. 이 사람은 김영철이고요, 이 사람은 장시호예요. 피의자와 검사 간에 '00 변호사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줬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카톡인가 봐요. 여기에는 그다음에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심.

속보 봐. 급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시호예요. 김영철이 '미안, 통화 가능?', 장시호 '5분만 있다가 하께. 세수 중'.

대한민국 검사는 구중궁궐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불러내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불러내고 그리고 이렇게 사적인 오빠, 동생…… 이거는요 김영철이 장시호를 불러냈는데 특검에 도착한 시간은 2시고 특검 종료시각은 9시 30분이에요. 2시에 불러내서 9시 30분에 특검은 종료됐는데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2시예요. 특검에 불려 나간 시간이 2시고요 종료시간이 9시 30분인데 복귀한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이런 내용이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제보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니라고 했고…… 이러니까 검사 영역이 좀 문제가 있다.

자꾸 사실 이름 얘기하기도 그런데 이런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적하면 바로 조치가 따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치가 따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사의 이미지는 나빠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 검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재명 사건도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하고 장시호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거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김영철 검사, 저희가 탄핵청문회를 했던 검사들입니다. 국회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판사도 대한민국의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이게 오겠습니까? 무리한 것에 대한 제보가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장동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후보 만들지 않으려고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후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도 그렇고 '특검 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특검 하자고. 그런데 윤석열 쪽에서 답을 회피합니다. 특검 하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답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떠들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끝내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돈을 받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탈탈 털다 나온 건 뭐냐면, 뭐가 나왔습니까?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집을 삽니다.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김만배 누나가. 김만배하고 이재명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 거지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 거지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의 커넥션이 있는데 이건 다 어디로 가고 묻히고 윤석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이재명을 잡기 시작한 게 대장동 사건의 진실입니다.

돈은 누가 받았습니니까? 윤석열 아버지 집이니까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으

로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부친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을 김만배 누나가 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과 김만배가 연결이 있겠습니까, 김만배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이재명과 연결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윤석열과 연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재명으로 엮는 그런 검사, 그런 검사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고 검사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대장동을 털었더니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 누나가 나오고 박영수가 나오고. 박영수 특검은 누구입니까? 윤석열이 특검 할 때 박영수가 특검이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과 함께 있었던 박영수가 대장동 50억을 받았다고 50억 클럽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장동에서는 이재명은 안 나오고 곽상도 50억, 박영수 50억, 이런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동, 윤석열과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누구에게 뒤집어씌운 겁니까?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운 겁니다. 이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유동규를 엮어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상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김용, 두 사람을 엮은 거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잊어 버리셔서요,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진상과 김용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김용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유동규는 석방이 되지요.

우리가 그때도 해 봤지만 유동규가 정진상의 집으로 돈을 가지고 가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유동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는 'CCTV가 없어서 그쪽으로 갖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CTV가 있어서 유동규가 왔다 가면 유동규가 왔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동규의 말은 진술로 하고 CCTV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엮어서 범죄로 만들었으니 대장동 사건을 범죄로 만든 그 검사들은 다시 다 낱낱이 감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김용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김용에게 주었다고 한 그날 그 장소에 김용은 있지 않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으로 김용은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둘을 엮는 것은 수사한 자가 기소시키기 위해 너무나 애를 쓰고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유동규를 이용한 이 정황들, 이것을 다시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검사들은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작했습니다. 이것처럼 큰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범죄 다시 다 감찰해서 검사가 조작하고 왜곡하고 범죄로 엮은 이 내용 모두 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상·김용과 연결되어 있던 남욱은 이번에 말을 다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게 하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김영환 의원님, 내가 진실이 있는데 검사가 거짓말을 요구한다고 거짓말하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1986년에 치안본부에 끌려갔고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거기에 도장을 찍으

라 그러더라고요, 3일을 잠을 안 재우고. 그러니까 제가 도장을 찍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다 도장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치안본부 끝나고 검사실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치안본부에 있던 것 그대로 '이런 거지?'라고 물으니 당연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약점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이대 총학생회장이라서 노트에 제 일정만 갖고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후배 집에서 숨어 지냈거든요, 일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후배 집 앞에 딱 와 있더라고요, 치안본부가. 그래서 검은 보자기에 쌓인 채로 치안본부로 달려갔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그 앞에 주변에서 어머니께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던 게 추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치안본부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이대 총학생회장이니까 국가보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저에게 무슨 책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갖고 있었던 책이지?' 이러고. 그런데 제가 후배 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배 건가?' 내가 잡혀갔는데 이걸 후배 거라고 하면 후배가 잡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거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또 갖고 와요, 저는 본 적도 없는 건데. '이건 네 거지? 이건 어디서 났지?', 그게 남조선인민해방전선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나는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국가보안법으로 딱 엮이는 거지요. 나중에 그게 뭔가 봤더니 남민전이라고 우리나라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수사했던 수사 기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구하려면 남산도서관에 가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배당한 사람이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내 게 아니라 그러는 순간 후배가 잡혀 오니까.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엮어서 내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구했냐고 또 묻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야 내 알리바이를 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묻지 않으니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지금 보면 수법인 거지요. 다 말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약간의 약점들을 가지고, 그때 저한테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김용·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엮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했는데 재판에서 풀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 증거를 계속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검찰의 개혁과 또 법원의 공정함을 위한 개혁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검사나 판사나 교묘하게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대장동 사건에는 오히려 박영수가 나오고 윤석열 아버지 집이 나오고, 나오기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유동규의 거짓말이 나오고 남욱의 진술 번복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닌 증거가 나오는데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조작해 버린다? 아무도 믿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얘기했듯이 박상용 검사는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진술 세미나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연어도 먹은 적이 없고 술도 먹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일요일 날 불러낸 건 이화영이 주중에 바빠서 그런 겁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아까 제가 튼 것에 보

면 주중에 계속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일요일도 계속 불러내고. 그리고 셋을 같이 불러내 놓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그냥 국회에 나와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니 검사로 피의자로 데려다 놓고는 온갖 협박과 조작과 회유가 있어 왔다. 검사가 진짜 검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말이지요, 대장동 사건. 이재명을 엮다 안 돼서 김용과 정진상을 엮었는데 그 모든 증거가 정진상과 김용은 무죄이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법무부에서 살펴야 합니다. 감찰해야 합니다. 꼭 법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대장동 사건에는 윤석열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고, 대장동은 김만배 씨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아버지 집이 연결돼 있고.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아버지 집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연결돼 있습니까? 박영수 50억 클럽이 나오고 곽상도 50억 클럽이 나오고…… 아니, 이재명이 나오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면 이것 다시 감찰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가 있습니다, 브로커. 조우형이라고. 이 브로커가 부산에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그런데 조우형의 변호사가 김만배가 소개해서 박영수가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나오면 된다. 그런데 진짜 거기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모두 다…… 부장검사였다고 합니다. 다 다시 수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다 둔갑을 해서 이재명과 대장동 사건이 된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둔갑해서 대장동 관련해서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검찰이 참 뛰어납니다, 뛰어나.

조금 다른 데로 가 볼까요?

이제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괴물과 같은 검사가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에는 900조의 청구서가 날아들었다는 것을. 소상공인들은 폐업에 그리고 의료대란에, 대한민국 군인들은 총을 들고 국회에 왔고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서고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장성들이 계엄에 연루가 되었고……

여기서 밝혀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계엄 하던 날, 계엄 하던 날 박성재는 무엇을 했나?

어제 박성재가 특검에 출석했었지요? 지하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왜 본인만 특혜를 갖는 거지요?

박성재가 계엄이 있던 날 교도본부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교정본부장.

김동아 의원님, 교정본부장이 누군지 압니까? 구치소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비상계엄 선포를 한 그날 법무부가 간부회의인가를 소집합니다. 법무부가 대책회의를 합니다. 거기 있던 감찰관인 류혁 감찰관은 그 자리를 뛰쳐나오지요. 그런데 그날 교정본부에서도 소집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교정본부가 왜 소집했을까요? 구치소를 담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모두 의심했습니다, 보도도 나왔고. 비상계엄 하는 날…… 박

찬대 의원님, 비상계엄 발표하던 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교정본부장과 통화를 합니다. 왜 했을까요?

(「국회의원 잡아넣으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교정본부랑 왜 통화를 해요? 저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요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데 어디 어디에 방이 비는지 체크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보도가 있었고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교정본부를 왜 부릅니까? 교정본부가 왜 소집을 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하면 가만히 감옥에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 동요를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다치면 다치지. 그래서 틀림없이 아까 말씀처럼 교도소 시설을 비워 놓을 수 있는지 체크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될 때 무슨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대선주자들에게 물었는데 '대통령이 되면 뭐뭐는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뭐를 안 하겠냐' 그랬더니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가시겠다 이런 뜻이지요?'라고 했는데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관저에 체포하러 갔을 때 안 나오려고 얼마나 숨어 있었습니까.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불러 대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관저에서 그렇게 안 나오겠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구치소에서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에 출석을 열 번도 넘게 안 합니다, 열 번도 넘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귀연 재판부 얘기로 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의 검사는 윤석열이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은 한 달에 열일곱 번, 열여덟 번, 열여섯 번 재판했습니다. 박근혜 재판은 6월 열일곱 번, 9월 열여섯 번, 7월 열다섯 번 이렇게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귀연의 윤석열 재판은 몇 번 하고 있는 겁니까? 4월에 두 번, 5월에 세 번, 6월에 세 번, 9월에 한 번. 9월에 재판 한 번 했답니다, 윤석열. 한 달에 세 번, 두 번 합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렇게 윤석열 재판부를 느림보 끝판왕으로 질질질질, 지귀연이 지연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부, 공정합니까? 이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던 판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키고 단란주점인지 룸살롱인지에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사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은 또 하지도 않습니다.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질질질 끕니다. 지귀연 재판부, 그대로 둬야 합니까? 지귀연 재판부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가 국민 대다수 여론입니다.

이런 재판부 보셨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구속 취소를 시킨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피고인을 구속 취소시킨 재판부는 유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둡니까? 그대로 둬야 윤석열을 석방시키니까 조희대가 지귀연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는 윤석열을 지켜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어떤 재판을 했습니까?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타임라인?

4월 22일 대법원의 2부에 배당된다, 이재명 사건이.

자료가 없을까요? 자료가 나왔네요.

국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원이, 최후의 보루가 지귀연 재판부처럼…… 박근혜 때는 한 달에 열일곱 번, 열다섯 번 했는데 지귀연은 윤석열 건을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두지요? 조희대가 그러고도 대법원장이 맞습니까? 왜 이런 걸 실드를 치지요?

그런데 지귀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희대가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3월 26일 날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3월 26일 날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4월 22일 대법에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되는데 어디에 배당이 됩니까? 2부에 배당이 됩니다. 2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 2부에는 파기환송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 2부에 배당된 걸 그날로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를 하는데 그날 회의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회피합니다. 그렇게 하고 딱 이틀 뒤인 4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보고 표결을 하라 그럽니다. 표결을 해서 10 대 2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저희 당의 대통령후보로 4월 27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희대가 4월 29일 날 '이틀 뒤에 내가 발표할 거야. 생중계로 선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 대 2로 파기환송 만들어 놓고 생중계합니다. 생중계하는데, 5월 1일 날 3시에 파기환송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엠바고를 걸었습니다. 뭐라고요? '나 대선후보 출마할 거야'라고, 4월 30일 날. 5월 1일 날 파기환송 날 거라고 4월 30일 날 엠바고를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시에 파기환송 되니까 5월 1일 4시에 권한대행직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출마를 선언합니다. 5월 3일 날 김문수가 됐는데 5월 10일 날 바꿔치기를 합니다. 미친 거지요.

그런데 고법으로 파기환송 된 게 5월 15일 날 변론기일이 지정돼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월 15일 날 그 변론기일에서 유죄가 나면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대통령후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는 대통령후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계획한 겁니까, 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 알고 진행해 나간 것 아닙니까? 저렇게 빨리할 때는, 고법에서 무죄 났는데 저렇게 빨리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해서…… 중요한 건 4월 30일에 한덕수가 이야기합니다. 나 대선후보 출마할 거야라고 엠바고 겁니다, 엠바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 되고 4시에 사직하고, 이들은 알았다는 내용이지요. 알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덕수와 조희대만 알았을까요? 저 한덕수와 김문수를 바꿔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쌍권 아니었습니까, 권영세·권성동? 권성동은 윤석열과 딱 붙어 있는 아주 찐윤 아닙니까? 윤석열과, 권성동은 찐윤입니다. 권성동이 조희대랑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한덕수랑 조희대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정상명은 누구입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주례고요 예화랑이라고 하는 불법 선거사무소의 주인의 장인어른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정상명이 윤석열 파면 재판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입니다. 정상명은 윤석열의 변호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누군가 또, 저 사람들의 관계는 그 관계만 있을까요? 조희대와 정상명은 경북고 선후배입니다. 윤석열과 조희대는 친구고요. 정상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인가…… 두 사람은 경북고 선후배입니다, 경북고 선후배.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과정 속에서 어떤 연결이 어떻게 있었는지. 권성동은 조경식 KH 회장과 KH 배상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재명과 엮기로 되어 있었고요. 권성동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조희대, 윤석열, 한덕수 과정 속에서도 또 찾아봐야 합니다. 왜? 통일교하고 권성동이 연결된 게 다 나왔잖아요.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조희대·지귀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지금 법안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윤석열 재판을 중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재판부에 판사를 하나 더 투입하고요 그리고 중계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무슨 말을 했는지 중계해 놓고 다 국민에게 공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법원은 스스로 알아서 바꿨어야지요. 이렇게 국회에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무서운 일은요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5월 15일에 서울고등법원,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했어요, 5월 15일로. 5월 15일 날 유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법 121조 혹시 아십니까? 국회법 제121조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저희 밤새 기다리다가 자료를 준비한 사람이 지금 바뀌어서……

저희가 현안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9월 30일에 현안 청문회.

국회법 121조는 뭐냐 하면 '본회의, 위원회는 현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다. 단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 121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회법 121조는 이런 겁니다. '아니, 왜 대법원장을 불러?' '대법원장이 나오는 게 맞아?' '대법원이 언제 나왔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장은 당연히 나오는 거였어요. 국회법이 있은 육십몇 년 동안 그 국회법은 있었던 겁니다. 국회법 121조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현안 관련한 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다. 단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로만 돼 있어요, 그냥.

이런데 왜 대법원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언제부터 대법원장은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 대법원장으로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대법원장이 나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국회법 121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민들께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사건 관련해서 기록이 얼마나 될까요? 7만 페이지입니다. 아까 짜고 치는 고스톱 한 번만 더 올려 봐 주세요. 기록이 7만 페이지입니다. 7만 페이지인데요. 맨 윗줄 한번 봐 주십시오. 4월 22일 오전 2부에 배당했으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그로부터, 오후에 회부했으니 4월 24일까지는 만 하루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

을까요? 그런데 표결을 해 버립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난 겁니다. 이것을 표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를 그대로 가지 않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7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을 어떻게 읽지요? 7만 페이지 복사하는 데 얼마큼 걸리지요? 7만 페이지 복사하는 데 얼마큼 걸리지요?

저희가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기록을 다 보았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뒤에서 쪽지가 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그 쪽지를 보더니 '예, 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본 7만 페이지 프린트한 것을 갖다 달라'라고 했습니다. 프린트를 할 수도 없지만 프린트한 것이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말을 바꾸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전산기록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전산기록.

그러면 김영환 의원님, 7만 페이지를 전산기록으로 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산기록 본 자료를 달라, 로그인 기록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가져올까요? 아직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대로…… 항소심에서 무죄 난 것을 바꾸려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만 페이지도 보지 않았을뿐더러 로그인 기록도 갖고 오지 않았고 전산기록으로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산기록으로 봤다고 말을 해 놓고 전산기록으로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죄 났던 것을 뒤집어엎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해 놓고 4월 30일에 한덕수는 출마하겠다고 엠바고를 겁니다, 여러분. 파기환송 날 거라고 생각하고 엠바고를 거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희대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할 수 있었을까요? 조희대와 윤석열, 조희대와 한덕수, 조희대와 권성동, 조희대와 권영세, 한덕수와 권성동, 한덕수와 권영세, 한덕수와 윤석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김건희 등 모두 다 체크해 봐야 합니다. 얘기에 나왔듯이 정상명도, 김충식도, 김건희도 그리고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다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그렇게 연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깡으로 김문수가 5월 10일 날 후보가 되었는데 5월 30일 날 한덕수가 출마 엠바고를 걸고 한덕수가 출마하겠다고 하고, 무슨 깡으로 국민의힘은 저 둘을 단일화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깡으로 김문수 후보를 날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윤석열이 없을까요? 그 뒤에는 김건희가 없을까요? 그 뒤에는 권성동이 없을까요?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같이 이재명 날리고 한덕수 옹립하고 이렇게 계획이 짜여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5월 10일 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5월 11일인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 날 유죄가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게 현실로 다 됐잖아요. 그러면 앞뒤에 누가 누구랑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다 낱낱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는 이유는, 정의롭지 못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한덕수 국회에 나와서…… 아니, 조희대 국회에 나와야 된다. 조희대, 한덕수, 지귀연 등 불렀습니다.

대법원장을 불러 놓고 현안 청문회를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회법 121조에는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다.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은 나오지 않았던 거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 나온다면…… 안 나올 이유가 없지요. 안 나온다면 뭔가 구린 게 있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국회법 121조, 국회법 121조에 의해 나와야 합니다. 국회법 121조에 의해 나와야 합니다. 국회법 121조에 의해 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김진성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충남 아산시 배방읍 김진성, 충남 아산시 배방읍 김진성.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너무 얼굴이 작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누구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가덕도에서 칼로 찌른 사람입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이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이 칼로 찔립니다. 1㎜만 벗어났어도 사망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지요. 그런데 이것을 휴지 같은 걸로 닦습니다. 제가 못 닦게 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건 제가 그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흘린 피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칼처럼 왼쪽 칼, 오른쪽 칼, 2개의 칼이 있습니다. 저 칼은 총길이 18㎝, 날 길이 13㎝, 개조된 등산용 칼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개조되었습니다. 손잡이는 미끄러지지 않게 붕대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 칼로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피를 철철 흘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피를 조금 이따가 닦아 버립니다. 물청소를 합니다. 제가 왜 물청소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증거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물었습니다. 서장이 매뉴얼대로랍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당시 부산경찰서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에 남겨 놨습니다.

저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 찌른 사람이 김진성입니다. 이 사람은 국민의힘 당원이었지요.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뭐를 하냐 하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충식, 김충식…… 잘 보십시오. 수첩에 '손 목사(세계로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김진성은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를 칼로 찌른 사람이고 김충식 수첩에는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 쓰여 있습니다. '손 목사(세계로교회)'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이 김진성을 가덕도까지 데려다줄 때 김진성에게 벤츠로 태워다 준 자가 있습니다. 그자가 세계로교회 신자라고 당시 헤럴드경제에 나옵니다. 그런데 김충식 씨 수첩에 '손 목사(세계로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충식은 나고야 태생입니다. 김인순과 인연이 있어서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합니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배후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수첩에서 문고리 3인방 조연경 연락처 등이 발견됩니다. 김충식 수첩, '용산 김 여사, 통일교 총재 비서, 캄보디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저 내용은 중앙에 있는 겁니다. '더 중앙'이라고 쓰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충은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이 '충은'입니다.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입니다. 둘이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이것은 김충식의 입으로 백운기의 정어리TV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을 따서 '충은' 사업체를 갖고 있고 이 충은 사업체는 충남 아산 배방의 땅을 매입합니다, 충남 아산 배방의. 그리고 신도시가 건설되고 그 땅으로부터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의 회사는 충남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김진성은 충남 아산 배방에 있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칼을 갈아서 이재명 대표 목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연합TV에서 증거물 올려놓은 것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있습니까?

저것은 연합뉴스TV에서 '김충식 창고에서 발견된 다량의 문서, 후원금 의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식 창고에 노상원 흔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건 연합TV가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들을 찍은 겁니다. 저도 이번에 새삼 다시 공부를 한 겁니다. 놀라울 일입니다. 저것은 연합TV입니다. 연합TV에서 찍은 겁니다, 저게. 저게 김충식 창고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 찍은 겁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 다량의 문서에서 저 봉투를 보면 봉투에 장군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중간에 노용래라고 있습니다, 노용래. 노용래는 노상원의 이름이, 바뀌기 전 이름이 노용래입니다. 저 봉투에 전시회의 후원자가 있고 저 안에 노용래라고 하는 편지가 들어 있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제가 한 게 아니라 9월 19일 날 나온 것들입니다.

앞으로 돌려 봐 주세요.

그것은 아까 앞에 연합TV의 저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노용래는 노상원의 그 전 이름입니다. 저것은 연합TV가 압수수색한 품목으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김충식과 노상원은 저렇게 오래전부터 압니다. 일본의 대학에 노상원이 다닙니다. 그 내용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 대학은 김충식이 알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이름이 덴 무슨 대학이었는데, 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저것은 연합TV가 발견한 것이고, 아산 배방의 충은산업—충은산업인지 충은기업인지—은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이 붙어서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목에 칼을 찌른 김진성은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하는 자입니다.

이 내용은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김진성이 혼자 그냥 했을까요?

천천히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용래를 아네요. 노상원의 원래 이름이라고 합니다.

(「천리대……」 하는 의원 있음)

천리대. 천리대와 덴 뭐던데.

(「텐리대」 하는 의원 있음)

텐리대. 텐리대가 천리대입니까?

텐리대에 2000년에인가 노상원이 학생으로 가는 것 같던데. 어떻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제기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뭐가 많은데 윤석열과 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네요, '김충식 창고 곳곳에서 노상원의 흔적, 10년 전 후원 정황도'. 이건 연합뉴스TV에 나온 기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충식 창고 곳곳에 노상원 흔적, 10년 전 후원 정황도. 이때 노상원은 노용래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특검이 최근 압수수색한 양평 창고 근처에서 김 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고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후원'이라고 적힌 봉투에 개명 전 노 사령관의 이름인 '노용래 장군'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용래, 노상원과 김충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합뉴스TV에 나와 있어서 특검이 압수수색한 목록들을 제가 한번 제기해 보면서 오늘 그 얘기 합니다.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 이것은 백운기의 정어리TV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충식이 이야기를 합니다. '충은은 무슨 이름입니까?'라고 백운기 선생께서 물으니 '충은 김충식의 충, 은은 최은순의 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은 충은산업을 통해서, 그게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좋은 제보를 해서 땅을 사게 되었고 그 땅이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많은 돈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하는 것을 제가 정어리TV에서 들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워서 다시 살폈더니 이렇게 연합TV에 관계가 있고 압수수색한 목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텐리대에 노상원이 유학을 가고 그리고 김충식은 텐리대에 있는 몽유도원도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김충식이 말하는 것을 직접 제가 백운기 정어리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상원과 김충식…… 그리고 김충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이 있다. 그 칼을 일본에게 주고 일본으로부터 몽유도원도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와 관련한 문건을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께서 수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행안부장관은 수사를 할 순 없지요. 행안부장관의 외청으로 경찰청이 있고 국수본이 있으니 꼭 우리가 법적 조치 해서 수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외국 정상회담 갔을 때 우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목에 엄청나게 걸려 있던 목걸이? 그때 그 목걸이를 보고 우리가 '그 목걸이가 당신 목걸이냐? 당신 목걸이라면 재산등록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재산등록 목록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목걸이는 뇌물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빌렸다면 빌렸을 때 차용증을 주고 받았느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고가의

명품 현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 인사청탁 의혹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6000만 원, 그라프 귀걸이 2000만 원, 티파니앤코 브로치 3000만 원. 특검이 확보한 물품 아닙니까? 저희가 '이 목걸이 뭐예요? 그거 왜 재산 목록에 없어요?'라고 계속 지적했을 때 김건희 쪽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매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매의 눈으로 봤고 '저 목걸이 자기 거일까? 그러면 재산 등록에 없네? 자기 게 아니면 빌렸을까? 그러면 차용증 썼을까? 아니면 재산 등록하지 않고 숨겨 놓은 걸까?'라고 했더니 어김없이 서희건설에서 인사청탁으로 받은 거였습니다.

죄가 엄청나네요. 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6000만 원,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윤석열은 이런 거 안 받았나? 김건희만 받았나 봐. 윤석열한테 뭐 안 주고 김건희만 주나 봐요. 김건희가 실세라는 얘기지요. 김건희가 실세라는 얘기고 샤넬 백 2개……

그런데 샤넬 백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나도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시장에 이거랑 똑같은 거 많지 않아요?

2000만 원대, 김 여사 측이 신발 등으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한 샤넬 백 2개. 로봇개 납품 사업 수주 특혜 의혹으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돈도 되게 많은 것 같던데 왜 이런 데 욕심을 부릴까요? 김건희 여사가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서희건설은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통일교는 여러 가지 사업에 특혜를 받기 위한 연결이 있었던 것이고요. 다 특혜가 있었던 겁니다.

저기 저 브로치 보십시오. 저 브로치가 딱 2년이 지나서 이렇게 감옥으로 가는 브로치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 브로치로 서희건설로부터 청탁받았다면 서희건설과 다리를 놔 준 자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다리를 놔 준 자도 전부 다 수사해야 합니다.

저 브로치가 김건희를 감옥에 넣고 있는 상황, 윤석열과 김건희……

그런데도 아직도 윤석열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한길.

역사 공부한 사람이 왜 그래? 역사 공부한 자가 저런 것 좀 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속속 모여드시니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서영교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은 박근혜 특검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박근혜 재판은 한 달에, 6월에 열일곱 번 합니다. 9월에 열여섯 번 하고 7월에는 열다섯 번 하고, 박근혜 재판은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빼요.

그런데 윤석열 재판은……

박지혜 의원님 한번 읽어 보세요. 4월에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5월에 세 번, 6월에 세 번, 9월에는 한 번 했어요, 한 번. 이것 만들었을 때가 좀 전이니까 또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정당한 겁니까? 윤석열이 재판에 열 번 동안 안 나왔습니다. 이런 지귀연 재판부가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고 신뢰도 받지 못하니 지귀연 재판부를 교체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 아닙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 교체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가 60% 가까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사위 국감 때 얼굴만 비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우리가 ‘아, 대법원장은 얼굴만 비치고 들어가나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국회법 121조입니다. 국회법 121조입니다. 국회법 12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위원회가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다. 단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장은 안 나오게 그동안 했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만 하고 가게 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있는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법 121조에. 제가 외웠어요, 외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나와서 답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월 22일 이재명 대표 사건이 2심 소부에 배당됩니다, 2부에.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7만 페이지입니다, 7만 페이지.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웬만한 기록은 보고 3심 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단 이틀 만에 표결로 끝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오면 안 됩니까? 국회법 121조에 ‘본회의, 위원회는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다. 단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사위에서는 의장께 보고드렸다고 추미애 위원장님으로부터 저는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럼요.

아니, 국회법에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없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나와서 이야기해야지 되는 거고.

(「도와드릴까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수사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의 가덕도에 갔다가 김진성이 찌른 칼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맞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옆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 칼입니다, 여러분. 저 칼이 저렇게 갈려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범인은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탈당했다고 하지요. 저 사람은 김진성입니다. 충남 아산 배방읍 북수리에서 부동산을 하는 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아산 배방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당시에 헤럴드경제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벤츠에 태워서 가덕도 쪽에 있는 호텔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있다. 벤츠 차량이 있습니다. 벤츠 차량에서 이 김진성이 내립니다. 그 벤츠 차량의 소유주는 누구다? 세계로교회 신자다. 세계로교회 신자다. 이것은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나온 보도입니다. 그 보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충식 수첩을 한 번 더 올려 봐 주십시오.

김충식 수첩에는 '손 목사(세계로교회)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자료는 "'최은순의 집사' 김충식은 누구인가?",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김충식과 최은순이 같이 살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 기업체 이름이 충은산업입니다. 충은 김충식의 충, 은은 최은순의 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부동산을 사는지 아십니까? 아산 배방에다가 삽니다, 아산 배방에다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좌진 여러분, 혹시 국가조찬기도회 사진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황교안과 만난 김충식입니다. 이게 누구야? 두 번째, 2019년 국가조찬기도회 황우여·김충식·안창호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그리고 이번 계엄이 있기 한 달 전 국가조찬기도회에 간 윤석열입니다. 이번 계엄이 있기 한 달 전 국가조찬기도회에 간 박안수입니다. 박안수는 누구입니까? 육군참모총장.

한 번 더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국가조찬기도회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윤석열과 박안수가 있습니다. 계엄이 있기 한 달 전, 이것은 황교안과 김충식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19년 건데요, 이것은 동부지회라고 합니다, 황우여·김충식·안창호.

그리고 김성환 장관께서 '김건희 모친과 사업한 김충식, 몽유도원도 반환 추진?', 이것은 지난 대정부질문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오빠에게…… 이 반환을 위해서 일본에, 서류를 김진우를 통해서 윤석열에 주었다라고 자기가 발언하는 것을 제가 백운기 정어리TV에서 들었습니다. 베일이 아니라 중요한 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재명 대표가 칼을 맞던 그날 이게 그 옷입니다, 여러분. 옷, 옷깃에 칼이 들어갔습니다. 옷깃에 칼이 들어갔는데 이게 단추 하는 옷깃이라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목숨을 건진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이 옷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증거물이잖아요? 버린 거예요. 이 버린 것을 찾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하나, 또 검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에 칼에 찔렸고 죽음을 딛고 살아났는데 당시 이것은 테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 자료를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부산 강서,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사건 발생(2보)/의식 있음' '목 부위를 과도로 찌른 불상자(60~70대 노인)에 의해서 출혈량 적은 상태'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죽을 뻔했는데 대테러센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 과도로 찔렀고'……

아까 그 칼 한 번만 더 보여 주세요.

저 칼로 찔렀는데 과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혈은 적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 이걸 만들어 냈는데요. 이걸 만들어 낼 때 대테러종합상황실의 책임자가 누구였을까요?

(「검사」 하는 의원 있음)

검사지요.

오, 서미화 의원 그냥 딱 때려 맞췄는데……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이 검사가 바로 김상민입니다. 그때 이걸 발표한 검사가 김상민입니다.

(「구속된?」 하는 의원 있음)

구속된.

이 김상민이 누구냐? 조국 수사를 아주 열심히 잘했다며 김건희가 김영선 자리에 꽂으려고 했던 그 검사가 김상민입니다. 김영선이 반발을 하는 이유는 김영선 자리에 김상민을 꽂으려고 했고 김상민은 현역 검사인데 출판기념회를 내려가서 합니다. '저거 뭐지? 현역 검사가 왜 저렇게 세게 저걸 해?' 이랬던 게 김상민입니다.

그 김상민이 가서 출판기념회를 했고, 다 내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김상민에게 주려고 하니까 김영선이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장관 자리 또는 공기업 사장을 줄게'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관매직이다라고 제가 명태균 게이트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김상민이라고 생각 못 했어요.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전화를 합니다. 텔레로 전화를 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영선이 그것을 녹음을 했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개혁신당에 갔고 '나 1번 줘. 이것 깔게', 그래서 거기서 칠불사에서 매화나무를 심는 그 장면이 그건데 그때 있던 사람이 김상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하면서 그 정도만 알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을 왜 그렇게 이뻐하는지 몰랐지만 어떻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현직 검사로 배포 크게, 간땡이 크게 가서 출판기념회를 했던 그 사람이 김상민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 조국 사건 때 수사하느라고 애썼으니 김상민을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김상민이 누구냐? 국정원에 있으면서…… 이 대테러종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원에 있습니다. 국정원의 김상민 검사였던 겁니다. 이 김상민 검사는 이재명 사건이 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테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60 내지 70대 된 할아버지야. 과도야. 출혈은 별로 없어. 그리고 경상이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발표를 했을 때…… 중요한 건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도 그 옆에 있고 저도 있었는데 칼에 찔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우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악' 하고 칼에 찔렸는데 우리는 놀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피가 철철 흐르잖아요. 그런데 119를 불렀습니다. '119는 언제 와요, 119는 언제 와요?'…… 그 주변에 경찰도 있잖아요, 원래 야당 대표가 왔었으니까. 그런데 119가 17분인가 뭐 17㎞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 오냐?', 그러면 119 차가 있는 곳은 거기 있고 제일 가까운 119라도 와서 처방이라도 해라, 이거라도.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응급조치. 그래서 가까운 데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고 어떻든 태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차 타고 가는 걸 보고 현장을 찍으려고 갔더니 벌써 종이로 닦고 있는 겁니다. 휴지로 닦고 있어서 내가 '그걸 왜 닦냐? 여기는 증거인데 닦지 마라'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있다 보니까 물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다 의문을 제기했지요. 제가 서장 불렀습니다, '왜 이러느냐?'. 그런데 이게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안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우철문이라고 하는 부산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대테러센터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 뭐야' 이렇게 발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김상민이었던 거지요. 김상민이고 중요한 건 그 칼 찌른 애는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하는 자고.

그리고 최혁진 의원님!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충식과 최은순은 아산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부동산개발업을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김충식이 백운기의 정어리TV에 나와서 직접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충은기업으로 무슨 판사가 소개해서 부동산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되어서 백 몇억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게 충은기업이다, 아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배방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이게?

황당한 거라서 우선 저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의혹이 아니라 정황이 있잖아요, 정황이. 이것을 제기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중요한 건 칼에 찔렸으면…… 이게 그겁니다, 이 사진. 이 옷이, 우리가 그날 부산병원으로 갔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부산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옷이 없어졌어요. 칼에 찔린 옷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그 병원에서 폐기물에 넣어 가지고 버린 거야. 그것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그렇게 다 살았고 지나갔으나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그림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이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 보여 드렸지요, 조찬기도회 사진. 그런 걸 보면서……

조찬기도회 사진 한 번 더 보여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혹에서 사실로…… 김충식 몽유도원도 반환 위해 일본 황실 방문 자인’, 이건 어디서 나온 건가? 여기에 이런 거 나옵니다. 텐리대학. 끝내 줘요, 이것. 나 이번에 당황해서 나도 공부를 더 하게 됐는데…… 여기서 한 번만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백운기의 정어리TV에서 한 건가? 거기에 사진들이 나옵니다. 텐리대학에서 김충식이 사진 찍은 것 그리고 몽유도원도. 이 몽유도원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했다는 거고, 이것에 대한 질의는 김성환 전 환경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텐리대학이라고 나오는데……

(「현 환경부장관」 하는 의원 있음)

현 환경부장관입니까? 전이지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부조직법 이름 외우느라고 애썼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그래서 어떻든 이 내용을 보면서…… 김충식 씨 얘기인데요.

‘일본 텐리대학 소장 문화재인 안견의 몽유도원도 반환 추진 과정을 직접 밝히면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던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 국보급 문화재 반환 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이 아닌, 문화재청이 아닌, 문화재청이 아닌 개인이 일본 황실을 방문해 협의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견된다.

김 씨는 과거 일본 황실을 직접 찾아가 황실 재단 대표 나시모토 다카오와 몽유도원도 반환 문제를 논의했다며 고 이어령 전 장관이 소장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교환 형식으로 제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시모토 이사장의 친서를 김건희 여사의—동생이네—동생 김진우 씨를 통해 대통령실에 건넸다고 밝혔다’.

이것 직접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나쁜 사람이네요」 하는 의원 있음)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는 2019년도에 황우여·김충식·안창호, 국가조찬기도회의 동부지회 사진이랍니다.

그리고 계엄이 일어나기 전 국가조찬기도회, 계엄이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국가조찬기도회에 간 윤석열과 박안수, 11월 22일이니까 한 달 전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전인가 봅니다, 10일 전 국가조찬기도회에 간 모습.

누군가…… 저는 당에다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테러, 이 대테러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었는지, 왜 이 옷들은 폐기되었었는지 그리고 왜 그 현장은 증거의 현장인데 바로 물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대테러센터에서는 별거 아닌 경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김진성과 김상민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김상민은 김건희가 김영선 자리에 꽂으려고 했던 그 검사, 그 검사 김상민은 이번에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김진우와 함께 이우환 그림, 이우환 그림을 김진우가 사달라고 하면서 돈을 줘서 그 그림을 샀다라고 한 자가 김상민 아닙니까? 김상민이 이번에, 김상민은 국정원에 있었습니다. 국정원에 있었고 조국 수사를 열심히 잘했다고 김건희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김영선 자리에 꽂으려고 했고 김영선은 명태균과 함께 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민을 꽂기 위해 김영선을 파 내려고 하니 명태균과 김영선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김

상민은 끝내 거기에 꽂혔나, 어떻게 됐나…… 출마했나?

(「못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못 했습니까?

그랬고, 김상민이 대테러센터에서 이런 발표를 했고 그 김상민은 지금은 이우환 그림이 김건희 오빠 집이야, 동생 집이야…… 이름도 헷갈리네. 거기에서 이우환 그림이 나왔고 이 이우환 그림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김상민이 사서 보내 줬고, 그러면 김상민은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김진우인가 김건희 동생이야, 오빠야…… 누굽니까?

(「오빠」 하는 의원 있음)

오빠. 김건희 오빠가 돈을 줬다고 하고 김건희 오빠는 그게 1억 5000이면 어딘가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준 돈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낱낱이 조사해야 되는 과정이다.

6시 반까지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드시 조사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하다가 놓쳤어요.

당에서 조사하고 수사해 주십시오. 당에서 조사하고 수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끼어 있는지도 다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엄청난 것을 이번 현안 청문회에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지검이 12월 17일 날 건진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남부지검이 12월 17일 날 건진 집을 압수수색하는데요. 제가 하도 자료가 많아서 이제 정리되고……

보좌진,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으면 띄워 주십시오.

송기헌 의원님, 압수수색할 때 보통 얼마나 하나요, 보통 압수수색하러 가면?

(「하루 종일 하는……」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루 종일 할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하루 종일. 보통 그러지요?

그런데 건진에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서 7시 54분에 가서 9시 13분에 끝냅니다.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1시간.

그거 한번 올려 봐 주세요.

건진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7시 54분에 가서 9시 13분까지 압수수색을 합니다.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딱 돈만 가지고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만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저 돈이 맞는지를 오후 3시 50분에 전성배가 사인을 합니다, '이거 맞아요, 제 거' 이렇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한 거지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되니까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압수수색했는데 저렇게 압수수색한 거 '저 이 돈 맞아요' 라고 확인합니다, 건진이.

건진이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돈다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쳐진 거에 돈다발

있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 돈다발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관봉 돈다발.

압수수색해서 사인할 때만 해도 돈다발도 있고 띠지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게 9월 며칟날? 아니다. 1월 9일인가 확인하니까 다 없어진 겁니다, 돈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없어졌는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집에 갔는데……

돈다발로 바꿔 주세요, 보좌진 여러분.

이건데요. 여기가 22년 5월 13일 겁니다, 돈다발이.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필리버스터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2022년 5월 13일 겁니다. 그런데 전성배, 건진은 뭘로 압수수색당해서 들어가냐면 지방자치단체장 공천권 알선수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 돈은 전부 다 2018년 걸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 스티커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겁니까? 22년 5월 13일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이지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저 돈은 윤석열한테서 나왔을 수도 있고 윤석열한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스티커도 사라지고 띠지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저 돈은 무슨 돈이 되냐면 2018년 돈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2018년 돈으로 둔갑을 해서 김용민 의원과 제가 특검에 갑니다. 그리고 이 돈다발을 들고, 제가 가서 '특검이 이 띠지와 이런 게 왜 없어졌는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수사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검에서도 2018년 건 줄 압니다. 그런데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5월 13일 거. 그런데 이것을 남부지검 애들은 다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검장도 몰랐고 다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마이크를 돌렸던 그 검사 보셨지요? 최재현. 이 최재현 검사가 저게 2022년 5월 13일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도 보고 안 하고 다 보고 안 하고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죄인입니까? 최재현이 죄인입니다.

최재현 밑에 있던 수사관 최선영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다발은 돈다발대로 있어서, 스티커까지 붙어 있고 비닐에 싸여 있으니 따로 뜯어서 셀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돈은 신한은행 띠지로 있으니 띠지 있는 채로 세었습니다. 나머지는 고무줄로 있으니 고무줄째로 세었습니다. 다 스티커를 붙여서 압수계에 줬습니다'. 그런데 압수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비닐하고 띠지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해져 있냐면 2018년 돈으로 전해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것 읽어 봐라. 뭐로 돼 있느냐?', 처음에 2018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2022년 5월 13일 거지요. 그러면 윤석열의 손을 탔는지 김건희의 손을 탔는지 누구의 손을 탔는지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 버리고 위에도 보고 안 하고 밑에도 보고 안 하고 놔둔 겁니다. 그런데 저 띠지에 모든 정황이 나오지요.

그런데 저자가 한국은행에 전화해 봤답니다, 띠지로는 어디로 돈이 갔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그런데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다 통화해 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겁니다. 혹시 저렇게 돈다발, 돈에 싸여 있는 것 5000만 원짜리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봐 주세요. 없지요. 그러면 저 돈다발은 손을 많이 탈까요, 손을 안 탈까요? 안 타지요. 그러면 저 비닐 위에 있는 지문은 몇 개밖에 없을까요, 아주 많을까요? 몇 개밖에 없지요.

(「다 외웠어요. 몇 번째……」 하는 의원 있음)

(「하세요. 저 처음 듣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지문은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띠지는 못 추적한다고 하지만 저 돈다발에 있는 지문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오지요. 당연히 나오는데 저 지문이 가장 잘 나오는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1. 유리, 2. 비닐. 저 비닐에 지문이 있으면 지문이 전체 다 나오는 건…… 지문감식은 어디에 있냐면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실에는 저 비닐에 있는 지문을 챔버라고 하는 곳에 넣어서 뭐를 뿌리고 뭐를 뿌려서 걔를 떠 가지고 DNA를 딱 넣으면 DNA 감식이 다 된답니다. 그런데 저걸 알았겠지요. 그래서 뭐를 뜯어서 없앤 겁니까? 비닐을 뜯어서 없애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2022년 5월 13일 날 이후에 나온 건데 이것을 없애 버리고 그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2018년 거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가 특검에 갔더니 특검도 2018년 건 줄 알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부실 수사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실 수사를 넘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작이지요. 위험하니 건진에게 빨리…… 저 돈을 챙겨서 증거를 없애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것도 의혹이기는 하나 문제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지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집에 압수수색을 갔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지금 말처럼 몇 시간 압수수색하고 옵니까? 1시간. 작정하고 압수수색하고 그것만 가지고 들고 온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검이 건진 집에 압수수색을 갑니다. 건진 집에 압수수색 갔더니 뭐가 또 나오나요?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신전이 나옵니다. 건진 은신처에서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신전이 나와 버렸습니다.

저겁니다. 저 밑에 가면 혹시 돈이 더 있을까, 저 밑에 누가 와서 돈 좀 놓고 갔을까, 아니면 이름이라도 놓고 갔을까, 온갖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일본 신전입니다, 여러분, 일본 신전. 아마테라스.

아까 김충식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나고야.

저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관님이 지금 다 알아요. 텐리대학도 알고 천리대학도 알고.

나고야에서 태어났고 저것은 일본 신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 신전만 딱 봐도 돈이 어디어디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곳곳에 들어 있을 것 같잖아요. 수첩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곳곳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1시간만 하고 왔던 남부지검, 돈다발은 갖고 와서 비닐까지 다 뜯어서 흔적을 없애 버린 남부지검.

그래서 검사가 수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소만 하라고요. 검사는 기소에 집중하고. 그런데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수사하면 돼요? 중대범죄수사청.

국민의힘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중대범 그렇게 나누면 지금도 수사가 느린데 더 늦어질 것 아니야. 여러분, 경찰이 다 한 것 또 검사가 하는 게 수사가 늦어지겠어요, 국수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같이 수사를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국수본이 같이 수사를, 이거는 대형범죄·부패범죄 하고 또 이쪽은 서민의 범죄 하고 이렇게 수사하는 게 수사가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일 잘하는 검사들 가시고 수사관도 가시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대형범죄, 마약범죄, 디지털다중범죄 등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잘할 거라는 겁니다.

검찰은, 저도 몰랐는데 모든 검찰이 수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검사가. 검사가 하는 곳은 전국의 다섯 군데만 수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수사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공소청에서는 기소만 하니 훨씬 더 전문적일 것이다. 그래서 검찰청을 정리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만드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수사가 훨씬 더 빨라지고…… 여러분, 검찰로 가서 알아보는 게 국민이 편하겠어요, 중수청으로 가서 알아보는 게 편하겠어요? 중수청이잖아요. 경찰은 수시로 가는데 검찰은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 중수청도……

뭐라고요, 박정현 의원님?

무섭지요. 나 정도 돼야 검찰에 자주 가요.

저희가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지 법사위지 하니까 검찰에 여러 번 갔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이랑 갈 때…… 아니, 민병덕 의원님이랑 을지로 때문에 갔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검찰을 많이 가지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중수청은 경찰처럼 자주 갈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빠르게 갈 겁니다. 왜 우리가 진작 그걸 안 했나 몰라요. 그래서 잘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오셨으니 제가 좀 더 유식하게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혁신의 정부 그리고 인공지능을 새로운 세상에 함께 적용하게 하는 정부,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는……

맨 앞으로 가 주세요.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약 70% 나오니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도 없이 만든 정부조직법 우리가 국회에서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다, 약 70% 나온다고 하니 더 잘하라고 빨리 통과시켜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 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여러분, 기획재정부는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을 함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여러분, 여기서는 공부해야 돼요. 기획재정부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나가는 것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어느 나라의 기재부야?'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어서 국무총리실로 신설을 하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쓸까요? 국민이 주신

세금에 어떻게 이자 붙여서 돌려드릴까요?’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획예산처가 신설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넘겨 주십시오.

재정경제부, 경제부총리로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재정경제부는 돈을 어떻게 잘 끌어들일 건가, 모을 것인가 이것을 기획하고 정리하는 부처로 경제부총리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지금은 기후의 위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후다 그리고 에너지다, 이 모든 것은 생태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만들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자 이렇게 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었으니 이것은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어떻든 기재부에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입니다. 이것은 최민희 의원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통신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훨씬 더 미디어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되 위원정수를 상임 5인이었던 것을 7인으로 바꾸어서 상임 3인, 비상임 4인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공영성·공정성을 담보하자라는 취지의 방송미디어위원회입니다. 동의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는 기소만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대형범죄, 디지털범죄, 마약범죄 등을 빠르게 수사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 국수본에서 수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한다면 국민들의 힘든 일을 훨씬 더 빠르게 수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라고 검찰청을 정리하고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기소·수사 분리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이 몇 년 전에 기소·수사 완전히 분리하자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인공지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내자.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총리를 신설하겠다 이런 안이라고 합니다, 부총리 신설.

다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차관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차관. 잘했지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어서 소상공인들이 경제 변화에 아주 어려운데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도 낮춰 주고 이런 일을 확실히 할 수 있게 소상공인차관을 두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8번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주면서 사고도 나지 않고 안전하면서 기업도 노동자도 같이 안전한 상생 만들어 내자 이래서 산업안전보건차관 격상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입니다.

국가데이터…… 통계청은 통계를 모으는 데 의미가 있다면 이 통계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산업으로 연결시킨다 이런 의미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아이도 같이 키우고 그리고 육아휴직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들 자살률이 세상에서 제일 높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가족부를 좀 더 확대 개편하고 힘도 주고 돈도 주겠다 이런 취지의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다음.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식을 돈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정부조직법을 다 알려 드렸는데 잘 들으셨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이 정부조직법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과 함께 전부 다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끝나 갈 시간이 된 것 같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의장 우원식 서영교 의원,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서영교 의원 예.

○의장 우원식 무제한토론 중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한국경제에 의하면 우리에게 온 청구서가 900조라고 합니다. 문화, 소상공인 등 그렇게 어려움을 만들어 놓은 윤석열. 윤석열은 장기 집권을 꿈꿨고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했고 그러나 끝내 우리 아들들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했지만 우리 아들들은 소극적 대응으로 우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김건희도 감옥에 갔으나 아직도 그들이 어떤 법꾸라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재판받고 제대로 처벌받기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서 정부조직법 국회로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경제 살리고 민주주의 만들어 내고 산업 일으키고 기후 살려내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이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온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회의장님과 부의장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짐이 많아서……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18시32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결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부승찬 의원, 안태준 의원, 이정헌 의원, 정을호 의원, 채현일 의원, 강경숙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34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8시51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8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7)

(18시56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6)

(18시59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9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 분야 정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7인의 합의제 기구입니다.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월 통과한 방송 3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방통위와 미래과학부로 분리시키면서 생겨난 비정상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정상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최형두)

(19시03분)

○의장 우원식 먼저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 제정법안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또 진보적 언론단체들조차도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좀 더 숙의해서 좀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자라고 걱정하고 또 요청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체계를 관장할 금융감독위원회법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하고 하는 이런 개편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내일 표결을 하시려고 하겠지만 저는 이 법안도 철회하고 보류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의장 우원식 최형두 의원님, 잠깐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9시 4분에 문진석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형두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지난 8월 이후에 저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무제한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강행하셨지요. 그 법안은 정말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살리고 우리나라 민영방송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정말 방송을 진영의 방송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의 편성과 방송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대로 왜 그것이 위헌적인지, 왜 국민들이 위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또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에게 미래를 위한 통찰을 주고 국민들이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공영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위임한 사람을 통해서 방송의 이사회, 방송의 대표 또 보도·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방송의 편향, 방송이 특정 진영에 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 헌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다시 국회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 위헌적인 법률을 계속 강제하는 그런 사태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안과 달리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의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진전, 새로운 전개 양상 때문에 지금 현재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철저하게, 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런 시민단체나 진보적 언론단체들이 이미 여러 방안을 냈고, 저희들도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숙의하고 같이 협의할 의향이 상당히 있고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상임위나 또 법안심사소위 또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제안해서, 짧은 순간이지만 안조위에서도 제기했지만 그러나 숫자에 밀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다수당 의원님들께 이제 표결을 할 때는 이 법안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 법안이 과연 그렇게 시급하게 고쳐져야 될 법안인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새롭게 만드는 부분을 철회했을 때만큼 그런 결단으로서 이 법안을 철회하시고 다시 심사숙고해서 정말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진전, K-콘텐츠, K-컬처, K-웨이브를 융성시킬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함께 논의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 한 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디어 거버넌스라는 엄청난…… 지금 언론계 또 방송계 또 미디어·콘텐츠 제작업계 또 여러 영화산업계, OTT, 수많은 곳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행 거버넌스 시스템은 그걸 융성하지도 않고 또 규제도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새롭게 하자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쟁점은 모두 미루어 놨습니다. 미루어 놓은 채 단 한 사람, 정무직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이 법안은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되면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금 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대국이 되었구나’,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에서 소비되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우리 문화계도 환호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 빈 강정이고 알고 보니 그 케데헌의 환희는 케데헌의 눈물로 돌아오는 이런 비감한 현실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케이팝, K-컬처, K-무비, 여러 K-웨이브를 일으키면서도 왜 정작 그것

을 생산하는, 생산해 온 K-미디어의 프로바이더들은 그리고 그 미디어들은 이렇게 위축되고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디어방송통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바라는 진보적 언론단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았는지 저기에서의 논의 과정, 지난봄, 초여름까지의 논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논의가 이 법안에 과연 왜 담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어떻게 위헌적인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미디어 제국, 드라마 제국, 드라마 왕국, 케이팝의 왕국이었던 우리의 큰 방송사들이 지금 매출 급락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현실과 달리 이렇게 싹을 틔웠던 방송사나 그런 프로덕션들은 정말 생존의 위기에 처하고 글로벌 OTT만 번성하고 그 돈을 벌어 나가는 체제,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OTT에 우리의 K-컬처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종속되어 가는 이런 현실, 이런 현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방송통신 콘텐츠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국력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어떻게 새롭게 통합하고 융합하고 또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관례적으로 다수당인, 지금은 여당이 되었습니다만 다수당까지도 이 필리버스터를 나누어서 하자고 시간을 쪼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24시간 뒤에 또 180명의 여당 의원과 또 여당에 동조하는 소수당 의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중단시키고 이 법을 기어코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밤새워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다음 차례로 준비 중이신 민주당 의원님은 밤새 시간을 갖고서, 이 토론 주제도 그렇고 쉬셔도 좋겠습니다. 이 법안을 좀 천천히 해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상당히 밤새워서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왜 국민들이, 왜 학자들이, 왜 전문가들이…… 그리고 케데헌의 그 엄청난 환희, 큰 기쁨, 충격이 알고 보니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외국으로 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케데헌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시면 모든 소재가 우리 서울이고 우리 한국적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 그 스토리 모두 한국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재산권은 소니 일본 회사 그리고 그 거대한 수확은 글로벌 OTT 회사인 넷플릭스가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당시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는 우편으로 DVD를 빌려주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익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KBS의 드라마 제작국 또 MBC의 드라마 제작국, MBC의 연예 PD들이 담당하는 그런 연예 담당 부서들 또 CJ ENM 같은 우리나라의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지난 10년 사이에 그 회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우리의 모든 K-콘텐츠의 지적인 아이디어, 지적인 재산, 역사 그리고 모든 음악 그리고

여러 모티브와 소재들을 모두 가져가서 그렇게 떼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나.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런 문제들도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그 장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흥얼거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춤추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서울과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한마디로 난리가 났지요. K-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한국산 제품 검색량은 지금 10배나 폭증했습니다. 문화의 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문화의 힘 덕분에 우리의 문화적 매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소프트 파워도 커졌고 그리고 또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뒤를 보겠습니다.

케데헌이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누적 시청자 수 1위입니다. 종전까지는 그것이 아마 '오징어 게임'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만들었던 그런 소재들이었습니다. 이 넷플릭스를 장식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한국 사람들 또는 한국계, '오징어 게임'만 하더라도 한국 PD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나오고 한국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서 우리나라 OTT와 우리나라 기업들도 원팀으로 뭉쳐서 한번 해 보자는 열의가 높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국회가…… 지금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고 진흥책도 나눠져 있고 규제책도 나눠져 있고 그래서 뭔가 진흥하기도 어렵고 또 규제가 너무 나눠져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기 힘든, 그 결과 우리가 싹틔우고 우리가 전 세계에 유행시켰던 그 케이팝과 K-무비와 K-드라마를 글로벌 OTT가 다 수확하는 이런 현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제2의 케데헌을 우리 힘으로 하자고 국내 OTT와 국내의 이런 기업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 상정해서 하려는 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법은 이런 노력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런 노력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있는 몇 개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칙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것, 부칙에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공직자들은 다 승계를 합니다. 그러나 정무직만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1980년 국보위가 공직자들을 교체할 때 했던 방식이었고 그 방식 때문에 국보위의 그런 부칙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그분들이 다 복직했다는 그런 판례를 하나하나 또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케데헌의 효과, 케데헌의 어떤 환희, 서프라이즈를 정말 우리 케데헌의 모멘텀으로 만드는 그런 미디어의 통합·융합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K-웨이브, 방송통신위원회 또 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곳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는 거대한 융합으로 달려가서 AI까지 덧붙여져서 큰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19세기, 20세기에 미디어가 막 생겨날 때, 방송·통신이라는 게 구분될 때 그때의 구분법에 따라서 지금 규제하고 또 진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넷플릭스 같은 곳이 정말 눈덩이처럼 자산을 모아서, 눈덩이처럼 이익을 모아서, 눈덩이 같은 투자를 받아서 엄청난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그 마중물이 되어야 될 국가적 재정을 그것도 이 부처 조금, 저 부처 조금, 저 부처 찔끔, 규제는 온 부처에서 문어발처럼 팔다리 그리고 뒷덜미까지 붙잡으니 어떻게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같은 케데헌의 모든 싹이었자 토대였던 것들을 키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밤새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장황하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되었던 많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금요일 밤 이 무제한토론을 지켜보실 국민들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활동 중에도 간간이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지켜보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진실을 알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케데헌의 어떤 쇼크, 케데헌의 서프라이즈 때문에 정말 모처럼 우리 국내의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결의가 넘칩니다. 티빙, 웨이브, 삼성, LG도 뜻을 모으고 해서 또 정부도 조각조각은 나 있지만 부처별로 해외를 겨냥해서 AI 더빙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송학계, 언론학계 또 통신학계, 우리 업계에서 미디어·방송·통신의 새로운 융합 거버넌스, 새로운 진흥 거버넌스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사용자들의 비영어권 시청 1위는 한국어 콘텐츠입니다. 한국어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는 앞으로 자막이라든가 더빙을 통해서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는 케이팝 들어 보면 한국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케데헌에서도, 케데헌에서 부르는 노래에서도 한국어 가사가 나옵니다. 외국인들은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국어 몇 마디는 이제는 중얼중얼할, 흥얼거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제작하지 않아도 또 중국어로 제작하지 않아도, 일본어로 제작하지 않아도 AI라는 자동 번역을 통해서, 자동 통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수많은 한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훈련된 AI 트랜스레이터(translator)를 통해서 전 세계로 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제2, 제3의 케데헌을 만들 좋은 환경이 있고 여기에 마중물처럼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미디어·방송·통신 융합과 새로운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여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이분들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표결을 미루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말 이분들의 노력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감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케데헌 같은 작품은 우리 역량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케데헌 같은 것이 다 한국적 모티브로 되었던 것이고 한국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인데도 우리는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방송사들, 우리가 방송 3법으로 그렇게 많이 토론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반대했습니다만, 말렸습니다만 기어코 통과시켰는데 그 방송 3법을 통해서 우리 방송사들이 수익을 내서 이 케데헌 같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과거와 같은 그런 케이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방송학회가 분석하고, 그 수익률 저하를 통해서 이미 방송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잃었던 그 참 비극적 현실을 제가 낱낱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때 MBC는 우리 국민의 친구였습니다. KBS도 국민의 방송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개입하고 정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고 그리고 노조가 여기에 또 가세를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굳히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좁은 세계관으로 광우병을 해석하고 FTA를 반대하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이런 분열과 갈등을 빚어내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 K-콘텐츠를 만들어 내던 그 방송사의 창의력과 방송사의 통합적 능력은 점점 쇠퇴해 왔던 겁니다. 방송사 내의 강력한 노조들, 피디·기자 노조들이 특정 편향, 특정한 생각, 자기들의 좁은 생각으로 우물 안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 K-콘텐츠의 원천이자 싹을 틔웠던 우리 공영방송들, 우리 방송들도 점점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방송 3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어코 방송노조, 특히 강력한 민노총 방송노조가 좌우하는 공영방송의 현실을 잘 알면서도 굳이 그 사람들에게 이사를 넘기고 경영과 편성을 다 간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그나마 그 방송사가 다시 한번 싹을 틔울 수 있는 이 케데헌 모멘텀을 만들 기회조차도 박탈했습니다.

그 부분은 곧 지금 이어지고 있는 위헌소송, 그 방송 종사자들이, 그 당사자들이 이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기한 헌법소송을 통해서 곧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앞으로 1~2년 사이에 이 법을 또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헌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서 법을 바꾸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점점 국회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 케데헌은 지난 6월 20일 스트리밍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90개 이상의 나라, 이제는 100개 이상 넘었을 겁니다. 시청률 10위에 머물면서 세계 넷플릭스 영화 시청률 1위에 올랐습니다. 사운드트랙 역시 빌보드 차트 앨범 부문 2위에 올랐고 1위인 골든,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누구나 다 이 골든이라는 음률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1위인 골든을 선두로 여덟 곡이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런 리듬, 이런 모티브 전부 케이팝입니다.

우리 KBS의 케이팝 프로그램, MBC의 케이팝 프로그램 또 JTBC와 tvN 또 CJ가 만들었던, 이런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그런 케이팝의 그 음률과 리듬과 모멘텀과 소재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는 이 혜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댄스 커버 영상을 비롯해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고 케이팝의

세계화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논평은 전 세계 학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케데헌이 케이팝 콘서트와 팬덤 문화, 한국의 무속과 전통 문양, 심지어 컵라면 핫도그 김밥…… 김밥 먹는 방식도 전 세계적인 열풍을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엄청난 디테일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초국적 문화로 끌어올렸습니다.

케데헌 모멘텀이 왔습니다. 광복 80주년에 정말 케데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전 세계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점은 케데헌이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어 영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리우드의 전략이 글로벌 관객을 끌기 위해서 아시아 문화, 그중에 특히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만든 한국 사람들, 한국의 제작자들, 한국의 창작자들,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하고 있는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 중 하나입니다만 이제는 제조업만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 문화 융합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이 미디어방송통신 설치법의 목적도 우리를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에 우뚝 서는 문화대국으로 만들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높은 실업률을 기대하고 있고 아버지 세대의 성공, 아버지 세대가 아직까지 철 밥그릇처럼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못 찾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방송통신을 새롭게 부상시켜야겠다, 새롭게 키워야겠다 이런 결의가 이 법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여당 의원이 또 조국혁신당 의원이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지 그냥 부칙에 다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 새로운 기구지요.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들을 모두 승계한다. 단 정무직 공무원—바로 이진숙 위원장—만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도 모순적이게도, 지금 정부가 그 문제점을 좀 깨닫고 또 국회에서 더 진지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서 법안 상정을 미루고 법안을 철회했습니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새로운 편제로 만드는 법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협의제 위원회 기구, 기제라는 점에서 그 법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는, 새로운 금융감독 개편 위원회는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된 바로 그 위원장을 그대로 이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위원회에 관한 법인데 한 위원회는 정무직 딱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만 제외한다 그러고 다른 법안에서는 그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시기에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좀 멈춰 주시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런 법안이 지금 우리 금융감독 체제와 금융을 진흥하는 그 시스템에 맞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중단시켰던 것처럼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이 법안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기대 또 국내 OTT-FAST 기업들이 원팀으로 뭉쳐 가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저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좋고 창의적이고 멋진 일자리를 바라는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자리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디어, 방송, 통신, 콘텐츠, 게임 이런 데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이 700조가 넘습니다만 이 700조 참 큰 거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국가부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를 더 늘리고 있는데, 이 700조라는 것이 미국에서 스타게이트라는 AI 프로젝트 하나 하는, 한 프로젝트의 돈과 같습니다, 5500억 달러. 오라클과 오픈AI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인 마사요시 손, 손정의 씨가 회장인 소프트뱅크가 함께하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하는, 다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가 700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재정 규모, 우리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면서, 재정 부채를 내면서 이렇게 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체부로 쪼개져 있고 방통위로 쪼개져 있고 또 무슨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예산을 쪼갤 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진흥은 고사하고 규제를 문어발처럼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는 몽땅 실종되고 금융위원회 개편 이후의 금융위원회 그 당초 법안, 지금 정부가 철회했습니다만 금융을 어떻게 진흥하고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이것을 쪼개고 붙이고 하려다가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문가들의 엄청난 반발 또 우리 당의 정무위원회의 걱정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되어서 스스로 철회했던 그 법안에서처럼 하려면 그러면 몽땅 다 승계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한 사람만 빼고……

제정법안이라는 게 그렇게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후속되는 설명을 통해서 그렇다면 정말 방송학계, 통신학계 또 미디어학계에서는,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를 바라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당 의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들어 주기를 바라는 좀 진보적인 그런 학계들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개편하고 단 한 사람만 몰아내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홀로 계시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위헌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틀째에 탄핵소추안을 내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장장 한 6개월, 7개월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해서 그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했던 이야기, 헌법재판관들의 결론을 통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런 새로운 법을 통해서 진정 원하는 단 한 가지 핵심적 이유, 시급성이라고는 그것 하나밖에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유

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되었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점을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돌아가겠습니다.

7쪽 보여 주실까요.

케데헌의 역설, 한류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 따르면 케데헌의 누적 시청 수는 3억 142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3억 뷰를 돌파한 콘텐츠는 케데헌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게 K-콘텐츠와 케이팝의 새 역사라는 소식을 전 세계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적 관점에서 케데헌은 엄연히 미국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이라는 새로운 융합적인 진흥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제시하지 않은 채 문어발처럼 여러 부처에서 발목 잡고 손목 잡고 뒤통수 잡고 뒷머리 채던 그런 사이에 우리가 키웠던 이런 케데헌 같은 엄청난 콘텐츠 소재가 미국 기업의 큰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작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했습니다. 일본 기업이지요. 그리고 배급과 투자는 넷플릭스가 했는데 포브스 같은 그런 외신에 따르면 이 작품의 제작비는 약 1억 달러라고 합니다, 1억 달러, 1400억 원. 지금 우리나라 방송사나 우리나라 CJ ENM 같은 대기업조차도 참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방송사들은 지금 모든 방송이 다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1억 달러를 투자한 뒤에 직접투자를 포기하고 제작한 소니 픽처스의 수익은 지금 280억 원 그리고 전액 투자 부담을 지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넷플릭스는 향후 활용 가치를 포함해서 10억 달러, 1조 4200억 원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게 매일경제의 분석 기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작·투자에서—한국이 빠졌습니다—한국이 빠진 한국형 콘텐츠의 성공을 놓고 이제 한류 4.0이다. 한류 4.0이라는 것은 한국 없이 한류로 대박을 치는, 한국만 소외되는 이런 뜻밖의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등에 업고 한국 문화는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만 직접적인 수혜에서 소외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우리 국내의 이런 사람들에게, 산업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도 아니고 그래서 더더욱 아쉽다는 겁니다. 더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점점, 가뜩이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낮고, 지금 헌법기관 중에 아마 가장 기대 수준이 낮은 곳이 국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국회나 대한민국 정부가 뭘 좀 조금이라도 도와줄 줄 알았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엉뚱한 법안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위헌적인 사태만 더 증폭시킨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제가 넷플릭스의 성장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디어들, 특히 지상파 그리고 종편 그리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매출액 추이도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미디어의 융합, 미디어 어떤 거버넌스의 융합적인 진흥책과 또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정교한 규제, 균형 잡힌 규제가 있었다면 초기에 우리가 넷플릭스에 뺏기지 않을 이런,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는 2000년대 초반은 수출 위주의 1단계였습니다. 외국인 아이돌 멤버나 현지 회사와의 협업으로 시장을 넓힌 또 2단계도 있었습니다. 최근 3단계에서는 아예 해외에 합작회사를 만드는 제작시스템을 또 수출했습니다. 케이팝 기획사 하이브 같은 회사들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레코드 회사와 합작한 다국적 걸그룹 '캣츠아이'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계속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가 어느 자리에서 '우리는 제국적 사고를 해 본 적이 없다. 제국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제국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본 적이 없지만 문화의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수출대국이기도 하고 또 몇몇 분야에서는 정말 세계가 넘볼 수 없는 큰 탑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국적으로 바라보고 문화 콘텐츠나 미디어도 제국적으로 생각할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법 토론할 때도 안타깝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방송은요, 우리나라 미디어 전반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처음 기자 생활 하고 여기 우리 신동욱 의원이나 또 민주당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언론계에 있을 때인 1980년대, 90년대보다 못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 국제뉴스 자주 나옵니까? 네팔에서 왜 젊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네팔에서 그 공산 독재자들,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독재자들이 그 분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서 헬리콥터 줄에 매달려서 그 특권 계급들이 도망쳐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내 방송에서 생생하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1980년대 전두환 시기를 거쳐서 민주화되고 올림픽 할 시기에는 그런 보도가 넘쳤습니다. 지금 특파원 수가 적습니다, 그때보다도.

우리 방송사는 제국적 사고, 제국적 집행으로 BBC 못지않은, NHK 못지않은 그런 보도로 동북아의 정말 등대처럼, 라이트 하우스처럼 '동북아를 보려면 또 세계를 보려면 KBS를 보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국격은 높아지고 지금 케데헌의 성공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의 수준, 방송 뉴스 수준은 그냥 국내에서 정치 싸움하는 것을 전달하면서, 그것도 특정 정파에 자발적 수족이 되는 또 민노총 방송노조의 편향에 맞추어서 그런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점잖은 지식인들은 오히려 외국 언론을 본다 그럽니다. 왜? 대한민국 방송 보고 있으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30대·40대 투자자들…… 지금 외국 기업들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지상파들이 그런 것 방송해 주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2000만~3000만 명이 해외 뉴스를 바라봅니다, 어느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떤 위기에 있는지, 어떤 산업이 부흥하는지, 어떤 산업이 전망이 있는지. 우리 정부가 뭐라 설명해도 이제 우리 정부 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보십시오. 무슨 방송 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런 높은 안목과 글로벌 투자까지 하고 세계를 살펴보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방송을 하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30%, 20%를 넘던 시청률은 지금 아무리 잘 나와도 6%, 7%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인기투표 하듯이 자기들 편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투표를 보고서, '갤럽조사를 해 보니까 어

느 방송이 1등이 나왔다’ 그게 시청률이 아니고요 그냥 인기투표, 선호도 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고 총리를 뽑는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우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납북자 문제,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그때 북한 가서 제기했었습니다만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던 그 문제를 누가 제기할 것이냐? 일본에서는 중요한 문제지요. 그리고 혐한적인 그런 내용들.

산케이라는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케이라는 신문이 그런 식의 조사를 하면 아사히보다 더 높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조사방법으로 해서 어느 방송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제일 신뢰도가 높은데 그 방송 시청률 5%, 6%입니다. 안 봅니다, 지금.

20년 전, 80년 88올림픽 끝난 뒤에 그때는 20%, 30%나 될 때였습니다. 그때는 해외 뉴스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계시지만 중동전, 중동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유가가 뛰고 유가가 뛰면 우리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하는데, 중동전에 거의 BBC 기자 수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 무슨 사태 생긴다고 KBS 특파원이, MBC 특파원이 종군기자로 가서 취재하는 것 봤습니까? 나라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NHK를 보면 서울, 광주, 평양 날씨 나옵니다. 우리나라 날씨에 일본 날씨, 저 선양 날씨 이런 것 나옵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지역 날씨 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국가, 그러니까 좁은 나라에서 서로 진영싸움 벌이고 편싸움 벌이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 똘똘 뭉쳐서 사장 뽑고 그런 데 몰두하는데, 그 몰두하는 데 우리 방송법 개정이 또 기여를 해서 더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관리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방송법은 21대 국회 때까지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의 선배 의원님들 또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이 다 글로벌 표준을 생각해서 정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었지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민노총 방송노조, 그 법 왜 바꾼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선거 때도 계속 민주당 찾아오고 우리 과방위 회의할 때도 시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법을 바꾸자 한 겁니다. 왜? 민노총 방송노조입니다.

우리 방송법 토론하고 개정안 논의할 때 국회 앞에서 시위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과 아무 관계없이 법을 바꿨다고 또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 결과가. 방송은 방송대로 지상파는 추락하고 있고 그 지상파가, 지상파는 뉴스 말고도 이런 교양 또 엔터테인먼트, 케이팝, K-드라마의 보고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서 또 우리 방송사들이 만든 것이 넷플릭스에 판매되어서 넷플릭스에서 또 더 큰돈을 버는 이런 선순환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방송사들이 다 쪼들려 가지고 맨날 파업하고 맨날 민노총 언론노조가 사장을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편에 드는 정치 편향적 보도를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광우병 사태 또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거대한 선동에 지상파가 동원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참 초당파적인 결정을 내려서, 저는 한미 FTA 같은 것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으면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시에 보수적인 정당에서 대통령 나왔으면 못 했을 겁니다. 민주노총 또 전농 또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서 아마 못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진보적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이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 국가의 전략을 위한 것이다라고 추진하고 거기에 우리 보수정당이 뒷받침을 해 주고 그것을 이어받은, 또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이어받으면서 완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엄청난 무역흑자를 미국에서 우리가 거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몇 년 전에 그 난리 쳤던 MBC의 피디들, 나중에 사장 되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MBC 다 망친 겁니다. 그 사람들이 MBC 미디어 제국, 드라마의 왕국, 엔터테인먼트 왕국, 케이팝의 산실이었던 MBC의 거대한 문화자산을 다 망친 겁니다. 그 알량한 PD저널리즘으로 편파적인, 협의한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PD저널리즘이라면서 방송을 다 장악하는데 그 방송을 누가 봅니까? 국민 절반을 보지 말라고 하는 방송사인데. 그러면 20% 오르던 시청률 10% 떨어지기 마련이지요. 또 거기다가 심각한 오보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데 지금 방송 3법 개정안에서도……

오늘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을 더 서두르는 이유 중 또 하나는 거기에 방송사 이사들을 뽑을 때 미디어방송, 지금 민주당이 설치하고자 하는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사,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참 우리 젊은 사람들의 꿈과 미래와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 갈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역행하는 이런 일은 좀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8번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우리도 OTT가 있습니다. 우리도 넷플릭스 같은 게 있습니다. 2016년에, 넷플릭스는 보면 지금은 대세 같지만 이게 10년도 안 됐습니다,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요. 2016년 1월이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9년 좀 넘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토종 OTT들을 만들었습니다, 왓챠 같은. 만들었는데, 왓챠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의 30분의 1 수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가 떨어지면서 지금 490억 원의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6월 달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왓챠는 자본총계가 796억 지금 감자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해외 플랫폼 종속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한미 FTA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선배 의원들이 걱정하시던 무슨 신식민지 같은 상황이고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디어콘텐츠 환경을 잘 만들어 주고 잘 진행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엉뚱한 법으로 역행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OTT는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OTT는 콘텐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 통합적 지원과 그리고 균형 잡힌 규제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그 호소에 호응해야 합니다. 호응해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전문가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영화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산업이 K-무비의 산실 아니겠습니까? 영화산업

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느냐. 저는 사실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전에,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 만들 때 그리고 뒤에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때처럼 범정부기구를 만들어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걸 밀어붙일 때 국회의장에게 우리 범정부특별위원회를, 미디어방송통신특위 융합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 여기에 걸쳐 있는 것이 지금 문체위도 있고 또 정무위도 있고 또 과방위도 있고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왜 이게 과방위에서 단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당의 박정하, 문체위 간사입니다. 우리 당 간사랑 함께 영화산업이 너무 심각해서 조찬 세미나를 했습니다. 영화산업 21년 만에 1억 관객이 붕괴할 위기입니다. 케데헌은 저렇게 난리인데 정작 케데헌의 모태가 되었던 우리 K-무비는 1억 관객 붕괴 위기에 왔습니다.

9쪽이지요? 다음 10쪽 보여 주실까요?

잠깐만 내가 자료를 좀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한국 영화산업을 보십시오. 영화산업이,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랬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반 토막이 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이 특히 지역에 가면 우리 마산도 그렇습니다만 극장가가 도심에 있으면 이 극장을 중심으로 소비 산업이 또 일어납니다. 영화 보러 와서 거기서 밥 사 먹고 옷도 사고 또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화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하니까 지금 영화관도 자꾸 철수하고 이게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 미디어에는 영화산업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지금 왜 똑같은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는 영화관에 못 가게 했으니까 영화관 관객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케데헌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콘텐츠 능력은 갈수록 글로벌화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왜 정작 그 산실이었던 영화산업은 저렇게 쇠퇴하고 있을까?

영화산업의 쇠퇴는 수도권의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 도시의 국회의원님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에 영화관이 있으면, 요즘 영화관 다 대개 멀티플렉스입니다. 그러면 영화 보면서 그 주변에, 우리 마산의 경우는 신마산의 경남대 앞에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가 있는데 거기 영화 하면 영화 보러 왔다가 거기서 밥 사 먹고 옷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놀고 합니다. 문화적인 경험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영화관이기 때문이지요.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의 도봉구에 또는 은평구에…… 영화관 중심으로 그 동네에서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이 훈기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다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3억 명이 넘던 관객이 1억 명으로 줄었으면…… 지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육성해야 되거든요. 소비쿠폰만으로는 계속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우리 재정적자를 계속 늘리는 요인이 되지만 소상공인들한테는…… 생각해 보십시오. 성북구나 또는 수도권의 안산이나 또 마산이나 극장가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3억 몇천만 명이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 인구의 한 10배가량 되는 사람들이 영화를 봤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신마산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나온 김에 옷도 하나 사고 또 서점에 가서 책도 하나 사고.

또 우리 마산회원구 같으면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CJ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화 본다고 하면…… 그래서 마산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이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3억 5000만 명씩, 서울의 성북구도 마찬가지고 은평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안산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화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영화관 주변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전부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영화, 미디어, 콘텐츠를 안 키우면 아무리 소비쿠폰을 많이 뿌려도 소상공인들이 크게 도움을, 그때그때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요 참 아쉬운 대로 그냥 입 축이는 정도만 되는 것이지 정말 해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영화산업, K-무비 K-컬처 이런 것들을 살리고 국내적으로는 당장 쇠퇴해서 거의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영화산업, 영화관 주변의 우리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리고 국제적으로는 케데헌에서 보여 줬던, 케데헌의 모멘텀을 받아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OTT나 미디어가 또 방송이 정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법제를 만들자, 함께 만들자 하는데 굳이 그것을 하지 않고 이 법을 꼭 오늘 해서 내일 해서 서둘러서 해야겠다, 그것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만 딱 이렇게, 이 법이 생긴 뒤로 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발효가 되는 즉시 부칙에 따라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위해제하는 이런 효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상의 공직자로서 임기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침해당했는데 그 원칙을 누군가가 가지고 따지겠지요. 이미 방송법 같은 경우도 방송사 당사자들이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서둘러서 한쪽 면만 보고 했던 입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을 곧 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한 해에 낸 법안 중에서 위헌결정 나는 게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그건 아마도 국회가 선량한 의도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원칙을 조금 놓쳐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큰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문제가 돼 가지고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 법 같은 경우는 헌법 침해 사실이 명백해지면 우리가 안 고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걸 버티면 23대 국회의원선거 때 아마 큰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 영화산업이 지금 이런 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까닭은 영화산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쪽도 관계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 쪽이, 문체위가 더 큰 관계가 있

지요.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 상반기는 문체위에서 했는데 이 영화산업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영화산업이 거의 정말 고사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걸 살릴 방법이 있었는데 문체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더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OTT에서 나온 수익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융합 거버넌스를 통해서 진흥책과 규제책을 정말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식으로 찔끔찔끔, 우리 국가 재정 규모가 미국에 비하자면 크지도 않은데 가장 큰 글로벌 파워인, 문화 파워인, 미국의 기업들이나 또는 미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데 그나마도 그것을 갈갈이 찢어서 찔끔찔끔 나눠 주면 그게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규제는 무슨 문어발처럼 곳곳에 다 뻗어서 이렇게 저렇게 잡아 죄면 어떻게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참 커다랬던, 지금 케데헌 성공을 불러일으킨 이런 수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지난 20년간 그렇게 배태되고 성장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광복 80주년 내내 그렇게 성장해 왔던 성과인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문맹률이 떨어지고 가장 교육열이 높고 가장 큰 기적을 이루었던 나라니까 스토리도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좀 해야 되는 시기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영화산업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영화산업이 이게…… 특히 지방도시에 계신 의원님들은 정말 한번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우리 지방을 살리는 길은 이 영화산업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도권에 조금 이른바 버블세븐의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의원님들도 한번 잘 가 보십시오. 그 동네의 가장 번성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장사를 많이 하고 전통시장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에 반드시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 영화관의 관객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 장사가 3분의 1 토막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도 이런 문제가 또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주는 어떤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제대로 영화산업 우리 문화 콘텐츠를 불러일으키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곧 예산철이고 예산을 다룹니다만 여기에 뭐 모태펀드도 끼어들고, 문화부가 하는 모태펀드 방통위가 하는 모태펀드 이런 것들이 다 작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같이 융합해서 하려 그러면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 거버넌스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냥 부처 간에 자기 밥그릇처럼 칸막이 해서 '나는 이것, 나는 저것' 아무런 시너지 효과도 없는 일을 반복한다면 돈만 계속 같은 곳에, 마른 대지에 큰 물길은 못 만들고 그냥 뿌리자마자 증발되는 그런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10페이지 보고 있지요? 10쪽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에 보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개월 평균을 보면, 외국영화도 많이 보지요. 그런데 그때 관객 수가 3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오른편에 2024년을 보면 3분의 1 토막이 났지요. 그리고 매출도 엄청나게, 반 토막이 났습니

다. 그러니까 영화사들이 다 지금 손실이에요.

그런데 영화사들이…… '그래도 우리 동네에 아직 영화관이 있는데' 그랬더니 오산입니다. 그 영화관들 부동산 계약 때문에 빼지 못해서 있는 것이지 시간문제입니다. 그나마도 없으면 문화적 혜택이 크게 없는 변두리 동네 또 지방의 소도시들, 소상공인들 거기 전통시장들 그나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한국 영화 또 영화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디어방송통신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에 국가적 융합, 통합 지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가 바로 11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나라가 다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보십시오. 중국은 작년에 거의 100%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전 대비 관객수를 회복했습니다. 미국도 칠십몇 프로 회복했습니다. 미국은 이제는 극장 잘 안 가지요, 넷플릭스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4분의 3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일본도 90% 회복했습니다. 인도는 120%, 인도는 다르니까…… 프랑스도 거의 100%로 회복했습니다. 프랑스 경우를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영화업계에서는 프랑스처럼 지원해 달라. 문체부가, 우리 정부가 프랑스처럼 지원하고 육성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영국 80%까지 회복했습니다. 독일 95%까지 회복했습니다. 멕시코…… 한국만 53%.

우리 영화산업이, 우리 영화사들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우리 영화가 스토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화가 넷플릭스 가면 대박을 칩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똑같이 코로나 겪었고…… 정부의 지원책이라든가 뭔가 융합적인 지원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 나라들 코로나 때 재정 많이 썼습니다. 재정을 써도 제대로 썼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극장이 회복되었습니다. 극장이 회복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신마산 댓거리의 메가박스 또 롯데시네마에 사람들이 예전처럼 꽉꽉 온다는 겁니다. 영화 하나 개봉하면 요즘 멀티플렉스이기 때문에 영화관이 한 대여섯 개, 10개씩 됩니다. 그러면 좋은 영화 하나씩 들어오면 하룻저녁에 그 영화 본다고 몇백 명씩 오겠지요. 그것도 며칠씩 오니까, 그러면 전통시장에 떡볶이집에 거기 우동집에 삼겹살집에 생선횟집에 옷가게에 커피숍에, 사람들이 나온 김에 거기서 만나고 장사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모두 어려운 겁니다. 소상공인이 모두 어렵다는 것이 이 지표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극장에 사람들이 가거든요. 극장이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대개는 사람이 밀집된 지역, 상권이 많은 데에 있습니다. 상권이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이런 큰 과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어딘가 토론회에서, 법사위에서 이야기하셨나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바꾸고 얼굴에 점 하나 찍어 놓고 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은 나가. 이거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 영화산업 현황에서 또 케데헌의 효과에서 한국 콘텐츠가 한국의 산업이 소외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산업이 오히려 종속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지금 영화산업이 21년 만에 1억 관객이 붕괴되니 이 붕괴의 결과가 지방도시, 수도권 변두리, 수도권 부심의 상권의 몰락으로 이어 가고 있다는, 이 지표가 이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키워 주지 못하냐 이거지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우리 지역의 많은 상인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영화관 좀 데려와 달라는 것이에요, 영화관. 마산이 한때 7대 도시였습니다. 1970년에 자유수출지역이 들어서고 2000년대,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노키아였습니다, 노키아. 노키아 휴대폰의 70%를 마산에서 만들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만 3만 5000명이 일했습니다. 지금은 7000명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섬도 있었고, 한일합섬은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서 줄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응답하라 2004년, 이른바 응4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들 마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극장 집 아들, 시민극장 집 아들, 코아양과 아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딱 그때까지—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데—마산 창동의 공시지가가 서울 명동보다 높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마산의 시민극장, 중앙극장, 강남극장 이게 다 개봉관입니다. 마산 창동 주변에, 부림시장에 몰려 있는 개봉관인데 여기에 새로운 영화가 하나 나오면 도로에 사람이 꽉 차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들 전부 창동에 상점이 있었습니다. 반도패션 등등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은 영화관이 없어요. 영화관이 멀티플렉스 때문에 줄어든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이…… 그래서 제가 지금 제2자유무역지역을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이 쇠퇴하고 이러니까 영화관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국회의원 된 뒤에 제발 창동에 영화관 하나 좀, 멀티플렉스 하나 좀 유치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있는 이런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상권의 쇠퇴를 살리는 것은 결국 문화의 힘이다, 그것은 영화다. 우리 지역 도시에서는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처럼 세종문화회관에서 보스턴 필하모닉이 오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영화관에서는 할리우드와 우리 K-드라마의 위대한 글로벌 콘텐츠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 혜택을 누리고자 극장으로 옵니다. 극장으로 오면서, 주말에 새로운 개봉을 하는 날에는 옆의 상권이 훈기를 띠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추억하기 때문에 지금도 시민극장이라는 극장을 사람들이…… 시민극장이 문 닫았는데 롤러스케이트장 하던 것을 시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목수들이 달려들고 해서 관객석을 만들고 창원시한테 약간의 보조를 받아서 시민극장이라는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100석짜리 관객이지요. 그것으로는 사실 과거와 같은 많은 것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하고 상권을 운영하시는, 상권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압니다. 문화, 영화 이런 것들이……

지역 도시에 유명한 밴드가 가서 공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

나 영화관에서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를 통해서 옛날을 추억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도시의 사람들 또 수도권 부심의 사람들, 변두리에 사는 부심의 상권밀집지역의 극장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극장에 관객이—지난 10년도 안 되지요—코로나 거치면서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우리 상권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것 하나로 딱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살리려고 소비쿠폰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 미디어 콘텐츠, 영화를 진흥시켜야겠다. 그런데 영화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12쪽 보시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제대로 써야 됩니다. 영화산업 지원 정책, 이게 롯데시네마에서 저한테 준 제안서입니다. 영화산업 지원 정책 제안을 볼까요. 여기에 미디어·방송·통신 융합의 거버넌스가 왜 절실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가요, 이것만 해도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서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도 못 만듭니다, 합쳐도요. 이번에 케데헌이 아마 1200억이지요, 이것 다 모아 봐야 케데헌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45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억, 민간기업 700억 이래 가지고 펀드를 만듭니다, 모펀드를 만들고 매칭펀드를 만들고. 그런데 이게 왜 문화체육관광부 다르고 이렇게 쪼개져야 됩니까, 정부도 작은데? 이래서 효율성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과 거버넌스 융합을 통해서…… 거버넌스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부처를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슨 칡넝쿨처럼 사방팔방으로 해서 사람을 칭칭 감고 있는 이런 규제를 좀 질서정연하게, 좀 예측 가능하게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의 융합 거버넌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관 이야기하니까 ‘영화관하고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겠지만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우리 영화산업을 비롯한 K-드라마, K-무비, K-컬처, 케이팝, K-웨이브, 한류 전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총역량을 모을 것이냐, 어떤 지혜를 결집시킬 것이냐가 바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의 거버넌스 융합에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기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하니까 영화 관객 3분의 1 준 것하고 우리 동네 상권 몰락하고 무슨 관계냐…… 3분의 1 줄었으니까, 상권에 3분의 1밖에 안 가니까 상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화산업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고 영화산업 살리는 데도 미디어방송통신에 정부 거버넌스의 융합이 필요하다. 예산 이렇게 나눠서 찔끔찔끔 쓰지 말고 통합해서 제대로 잘 쓰고 또 문어발처럼 칡넝쿨처럼 칭칭 감아서 기업들 괴롭히지 말고 정말 창의력 있는 기업한테는 실패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고 정말 제대로 수확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12쪽 보시면 지금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라고, 이래 가지고 미디어전략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450억, 350억 합치면 800억입니다, 800억. 케데헌 투자자금 초기 제작비가 1400억, 1400억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정부 돈 이렇게 예산 모아 봐야. 이 예산도 좀 늘려야겠지요?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쪼개쪼개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정부 부처의 다 철밥통이지요, 이것이. 규제와 이런 예산이 권력이니까요.

그래 가지고 정부 800억, 민간기업 700억을 만들어서 모태펀드를 만듭니다. 그게 1500억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매칭 산업은행, 인터넷TV, 인터넷TV가 조금 버니까 돈 내라고 해서 500억 만들어 가지고, 자펀드 6000억 이렇게 해서 1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새로운 융합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산업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한국영화를 재도약시킬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국영화가 다시 붐을 타야 우리 극장, 여전히 극장의 추억, 멀티플렉스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나오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11쪽에서 한국 영화산업 현황을 코로나 직전과 코로나 이후 비교를 해 봤는데 전 세계가 극장에 안 가는 것 같으면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지만 유독 대한민국만 극장 가는 인구가 반 토막이 난 겁니다. 프랑스·중국·미국·일본·독일 전부 다 넷플릭스가 그렇게, 넷플릭스의 본국인 미국에서도 영화 보러 갑니다.

영화산업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작 이렇게 영화산업지원정책펀드, 과학기술정보통신 350억 쪼개 가지고, 이렇게 잘게잘게 쪼개서 부처가 나누어서 그걸로 규제하고 그걸로 뭐 하고 하니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법에 그런 것 다룬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그렇게 시급합니까? 정말 제대로 키워야지요, 제대로 해서. 그러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3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몇 개 어제 의결했지요? 우리 딱 날짜 정해서 12월 말까지 하자 그러면 정해서 같이하면 여야가 다 하겠다는데, 우리가 안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겠다는데……

또 그리고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범부처가 총리실 산하로 이 미디어방송통신을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전에는 방송과 통신이 별도였는데 방송과 통신이 새로운 융합 현상을 보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야겠다 해서 정부 내에서 이것이 한 부처의 소관이 아니니까 여러 개 부처, 그래서 총리실이 나서고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만든 것 아니에요. 만든 것을 지금은 미디어라는 엄청나게 새로운 상전벽해가 생겼으니 그러면 더 큰 융합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과방위에서만 법안이 발의된 지 딱 최소 숙성기간 거치자마자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영화산업을 위한 재도약 펀드를 도입할 때 이 재도약 펀드는 이제는 과기부 쪼개고 문체부 쪼개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이것은 정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의 관장 범위 중에 OTT 문제가 있었는데 OTT 같은 경우는 문체부가 반대하니까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도 여기에 의견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OTT 문제는 글로벌 투자와 관련된, 글로벌 회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상마찰 요인이 됩니다, 미국에서 당장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부처가 협의해야 되고 이것을 지혜롭게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러다 보

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떼 놓고 지금 서둘러 빨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몰아내려고 지금 그것밖에 더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했을 때도 6개월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전에 누굽니까? 수많은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대통령 탄핵재판했던 그 탄핵재판부가, 헌법재판소가 기각해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몰아낸다고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시 그렇게 강제해서 무리하겠지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체가, 부칙조항으로 사람을 교체한 것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공직의 담임권, 공직의 임기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론 나면 그 망신을 누가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다시 13쪽 보겠습니다.

영화산업 21년 만에 1억 관객이 붕괴됐는데 이것도 한편에서는 케데헌의 충격, 쇼크, 서프라이즈, 케데헌의 디스페어, 케데헌의 눈물이라고…… 속 빈 강정이 되어서 보니까 우리한테는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이 서글픈 현실과 함께 살펴볼 또 다른 지표가 바로 영화산업 21년 만에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3분의 1로 관객이 준 이 비참한 현실, 그것이 지역상권의 쇠퇴와 몰락으로 이어져 가는 이 악순환, 이것을 끊기 위한 미디어·방송·통신 융합의 정책과 예산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가박스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인데요. 영화산업의……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영화니까 미디어랑 무슨 관계냐 그러지만 지금 영화산업하고는 OTT랑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디어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 방식이 있거든요. 극장 개봉 이후에 부가 판권 중 하나인 OTT가……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OTT도 키우고 영화산업도 키우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OTT만 크고 영화산업은 죽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OTT 성장에,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가 필요한 겁니다.

절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외면하고. 그래서 문체위도 이것을 함께 다루어야 되고요. 문체위 따로 과방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문체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관련 상임위가 모두 해서 국회의장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위를 통해서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영화산업에도 OTT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면 OTT랑 어떤 계약관계를 맺게 해 줄 것이냐. OTT의 OEM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영화산업이 OTT가 되니까 영화 제작비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펀드 같은 것도 어떻게 매칭해 줄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가 그냥 관행적으로 '작년에 350억, 450억이니까 올해는 350억, 450억 그대로 가지 뭐' 이렇게 백날 퍼부어 봐야 영화산업은 쇠퇴하는 겁니다. 영화산업이 쇠퇴하니 이제 좀 있으면 20년 계약했던 극장들 철수하면 우리 지역의 상권에 극장 하나 없고, 극장 하나 없으면 그나마 오지 않던 사람들 이제 안 오면 그 전통시장의 상권이라는 것도 영원한 추억의 장소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케데헌의 모멘텀을 찾아서.

영화산업이 외국에서 성공 사례가 있거든요. 외국 성공 사례를 보면 됩니다. 미국은 어

떻게 했는지, 영국은 어떻게 했는지, 프랑스는 어떻게 했는지, 독일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 미디어 통합·융합 사례를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연구하자 그래도 연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금융도 중요하지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합하는 것.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됐고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결단을 잘 내렸습니다. 미디어방송통신도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에 꽂혀서 그 사람을 탁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상권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꿈과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우리 경제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게 이렇게 서둘러서 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그것은 뒤에 따로 하자는데 어떻게 따로 또 합니까? 그렇게 법을 몇 달 만에 한 번씩 바꾸고 이럴 겁니까? 지금 오히려 이삼 개월 더 차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야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빨리,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많은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임명하셔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할 일을 안 함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도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만 안 함으로 해서 지금 생긴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민생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 디지털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그 가족들, 그 피해자들의 심정을 정부 여당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쫓아낼 때까지 안 한다고 지금 그 임명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5인 체제기 때문에 이제 정부 여당이 새롭게 사람들을 임명하고 하면요 정부 여당의 뜻에 맞는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칙에 따라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여야가 함께 3명의 국회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당과 상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야당은 우리 몫이니까 이 사람 할래' 이렇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인권위원에서 봤듯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면서 당론처럼 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야당 몫 인권위원을 그렇게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방법이 있습니까? 협의해야지요. 협의해서 빨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그 사람들을 채워서 규제의 부재 또 심의 부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 그나마 있는 정책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통합적인 미디어 거버넌스 만들 것이냐 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 방송통신위원장이요 아무리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논란이 많았지만 임기 못 채운 사람 딱 한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처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참여를 시켜서 '이 정부는 참으로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사이를 못 참고 또 배척하고 이런 것을 보고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자꾸 무슨 엉뚱한 시그마를 씌워서 자꾸 이렇게 한 면만 계속 강조해서 되풀이해서 각인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글로벌 OTT를 위해서도 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미국 같으면 FCC인데 FCC가 지금 통신·해커 이런 것 다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능숙하게 소통하면서 이 문제

정책적 해법을 찾아내고 공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북대 영문과 나와서 영어 잘하고, 중동전 종군기자로서 우리 한국 언론의 위상을 높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못마땅해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체제만 회복하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서두르고, 내년 7월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겨두면 '정말 이 정부 여당은 법치를 지키는, 헌법을 지키는 정부구나'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쉽습니다.

제가 지루할 것 같아서 넷플릭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무리한 것은, 왜 영화산업을 장황하게 이야기했느냐? 케데헌 모멘텀, 케데헌 서프라이즈, 케데헌 디스페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케데헌의 모멘텀을 찾자. 그것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 융합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체위가 같이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지금 K-무비가 영화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뭐가 잘못했다, 우리 정부가 뭔가 결핍돼 있다, 우리 국회가 뭔가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핵심적인 증거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다들 그때는 극장을 닫았으니까 못 했는데 지난 5년 만에 모두 원상회복했는데 대한민국만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화산업 관객만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게 우리나라 K-무비산업, 우리 K-영화산업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K-영화산업 콘텐츠 그렇게 잘 만드는데. 정부가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고 정부가 통합적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고 국회가 제대로 된 일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관객 수가 3분의 1로 주니 우리 지역 도시의 도심의 상권이 3분의 1 손님이 안 오니 타격받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21대 국회 때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설문을 해 봤습니다. '보통 당신이 영화 보러 가면 그 동네의 영화관 주변에서 돈을 얼마나 쓰십니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보통 한 5만 원 안팎을 쓴다고 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중국집에도 가고 또 스파게티도 먹고 회도 사 먹고 옷도 하나 사고. 그리고 영화관 주변이 전부 우리 지역 도시에서는 상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영화관에 사람이 잘 안 가는 거지요. 대신에 전부 OTT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의 현상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정부만 정책이 결여되어서, 예산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않아서 대한민국 영화산업만 지금 이렇게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반 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표를 통해서 상세히 보여 드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 지금 영화산업만 하더라도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50억 모태펀드, 문체부에서 350억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인데 그것도 정부가 융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해 줘야 그나마 힘겨운 우리 영화산업이 일어나지. 그래서 통합 거버넌스,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법—새로운 제정안이지요—이 제정안은 멈추시고 이걸 포괄하는 새로운 법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강조점이 지금까지…… 지금 1시간 반 했습니까? 1시간 반가량의, 10분의

1 했습니다, 이제. 10분의 1 했던 부분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실 테니까 이제 넷플릭스 이야기하겠습니다.

14쪽 보여 주십시오.

넷플릭스……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우연치 않게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스턴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였고, 정확히 말하면 보스턴 옆의 캠브리지라는 시였습니다. 그때 우리 비디오 같은 것 많이 빌려 보고, 그때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 한미 FTA도 막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감격적인 순간도 보았고 또 미국 대통령이 흑인, 첫 아프리칸 아메리칸(African American)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 넷플릭스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으니까, 그때 넷플릭스라는 곳은 블록버스터에 가서 비디오를 빌리지 않고 넷플릭스에 신청을 하면 DVD를 우편으로 보내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DVD로 우편 대여를 했습니다. 그때 한 달에 10달러인가 20달러를 내면 DVD 두 편을 동시에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그리고 DVD 하나를 반납을 해야 두 편을 또 보내 줍니다.

이게 앞서는 비디오 대여점 블록버스터, 우리나라에도 비디오 대여점이 많았습니다만 비디오 대여점은, 블록버스터 같은 이런 데는 그 비디오테이프가 이만했지요,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만. 그거는 우편으로 보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DVD라는 매체가 우편을 통한 영화 콘텐츠 배포, 수익을 얻는 이런 비즈니스를 만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통을 하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2007년부터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막 활성화됩니다.

2008년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지금 우리나라도 일반화됐습니다만—오바마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선거 캠페인에 이메일 등록을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유튜브 링크가 딱 옵니다. 오바마가 나를 딱 보고 있는 유튜브가, 눈높이에 딱 맞는 유튜브가 이메일로 옵니다. 누르면 오바마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오바마 캠페인에 처음으로 CTO(Chief Technology Officer)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을 하는 전문적인 캠페인 매니저가 등장하는 것도 획기적인데 이 시기에 넷플릭스도 우편으로 막 DVD를 하다가 그 장사가 상당히 잘됐던 모양입니다. 서비스를 본격 출시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있고 또 넷플릭스도 우리나라 CJ라든가 CJ ENM이라든가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방송했던 것을 그냥 오리지널이 아니고 해 주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IP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면 조금 수익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과감하게 자기들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라는 이 영화를 저도 즐겨 봤는데 이게 미국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사악한 대통령 부부지요. 권력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대박을 터뜨렸지요.

그런데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이것도 사실은 미국 오리지널 콘텐츠는 아닙니다. 영국 BBC인가 영국 방송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같은 걸 새롭게 재가공해 가지고 리메이크해 가지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글로벌 확장을 가속했어요. 오리지널 대작 지속합니다.

그런데 참 영화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큰 위기를 맞았는데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청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우리나라도 OTT 만들어서, 전 세계가 OTT 만들면서 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략으로 해서 계속 등장했는데요.

다음, 16쪽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도 한때 어려워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2개의 유통업체가 싸웠습니다. 비디오를 이렇게 빌려주는, 블록버스터에 가면 비디오라는 VHS 방식의 이런 꼭 책 한 권 두께만 한, 이런 두께만 한 비디오 빌려주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것도 했지만 블록버스터에서 DVD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블록버스터는 오프라인 상점들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살던 미국의 버지니아주 같은 데 가면 H-MART, 하나로마트 약자인데 H-MART 옆에 보면 항상 블록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이 블록버스터도 이만한 두께의 VHS 비디오테이프도 대여를 해 줬지만 또 DVD도 대여해 줬는데…… 하여튼 넷플릭스는 무조건 우편으로, 이런 가게 안 두고 우편으로 DVD를, 저런 빨간 안 저기가 DVD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저걸 딱 접으면 꼭 DVD 크기로 정사각형의 우편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넷플릭스 좀 어려워서 블록버스터한테 이걸 팔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블록버스터가 비웃었다고 합니다, 네까짓 것들이…… 이게 참 비즈니스라는 게 이렇게 급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언론의 기사입니다. 넷플릭스가 한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블록버스터가 한때는 넷플릭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블록버스터라는 이것도 이제 구 미디어지요. 비디오에 비하자면 넷플릭스라는, DVD라는 것은 새 미디어고요. 그런데 이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지요. 지금은 집에 DVD 플레이어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부 텔레비전 켜면……

그래서 OTT가 왜 중요해졌느냐? 지금은 삼성 텔레비전, LG 텔레비전, 구글 텔레비전 모두가 보면요 이제는 KBS, MBC 안 봅니다. 그냥 넷플릭스 그다음에 아마존 그것 보는 것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미 삼성하고 LG의 리모콘에 넷플릭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미디어방송통신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융합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리모컨에 이미 융합이 시작, 거대한 컨버전스(convergence)가 시작됐는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송, 통신, 미디어, 문체부, 과기부, 방통위 이렇게 갈기갈기 다 찢었고 또 무슨 다른 거는 엉뚱한 데 개보위 이렇게 나가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문화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방송 콘텐츠 자산이 1천만t이 있는들 이것을 엮어 주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정부 시스템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디어·방송·통신 융합의 이런 체제, 정부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해서 그것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이름 슬쩍 바꿔 가지고 방통위랑 똑같은데 어디 과기부에서 공무원 몇십 명, 이삼십 명 더 오는 정도의 직제 개편을 가지고서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그런 외피를 써서 영어 잘해서 FCC 수장이랑 영어로 능숙한 협상도 할 수 있는 이진숙 위원장 몰아내려고 그러지 말자. 지금 임기 내년 7월이니까 앞으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임기를 지켜 주고 공직자의 임기를 지켜 주자.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달랐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민주주의가 한 발짝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이전의 정부는 뭘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전 정부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수당으로 전락했고 이렇게 매일 민주당한테 지금 휘둘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맨 말만 하면 지난 정부 탓하고. 이제는 이 정부가 잘하면 되는 거지. 이 정부가 잘하고 이 정부가 잘해서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을 더 진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넷플릭스 연도별 매출과 유료 가입자 수 보십시오. 정말 엄청나지요? 17쪽이 그렇습니다. 17쪽 보실까요? 이것 엄청 납니다. 매출도 엄청나고, 지금 2015년부터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매출 6배, 유료 가입자 4배가 늘었습니다.

18쪽 보실까요? 우리나라 OTT 보십시오.

유료 가입자 수는, 지금 티빙하고 왓챠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토종 OTT한테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규제하는 당국이, 지금 규제와 진흥이 뿔뿔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으니, 안 그래도 넷플릭스한테는 자본력으로든 시장 쪽으로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는 진흥책도 조각조각, 규제는 칡넝쿨처럼 칭칭 감겨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게 하니까 클 수가 없지요.

그 결과, 19쪽 보십시오.

주요 OTT 연간 국내 매출 추이를 보십시오. 넷플릭스 저렇게 쭉쭉 크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티빙, 그나마도 참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라는 새로운 환경, 지금 제가 왜 OTT를 강조했냐면 OTT가 지금 미디어 상전벽해의 대표적 주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집안에서도 다 보는 TV 리모컨에 이제는 1·2·3·4·5 채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직 있을 텐데 삼성이나 LG의 큰 채널 보면 아예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내가 넷플릭스를 볼 수 있도록 넷플릭스 채널이 있습니다. 디즈니 채널도 따로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미디어·방송·통신의 거버넌스 통합·융합 또 규제가 예측 가능하도록 좀 질서 정연하게 규제 환경도 개선하려고 하면 이런 새로운 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이 내용은 빠져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OTT에서 보듯이 OTT를 꽃피우는 그 콘텐츠는 전부 한국산인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소외받고 있다. 그리고 국내시장에서 우리 영화 산업도 홀대받고 있고 소외받고 있고, 오히려 3분의 1 토막 나서 영화관 주변의 전통상권까지도 완전히 쇠퇴시키고 있다 이런 양상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TT를 어떻게 할 것인가, OTT의 육성과 또 OTT의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핵심. 미디어방송통신 설치법이 중요한 게 미디어·방송·통신의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핵심입니다. 그것 빼고 논의한들 케데헌의 서프라이즈가, 케데헌의 환희가 케데헌의 디스페어(Despair), 케데헌의 눈물이 되는, 절망이 되는 이런 현실을 개선해 보려는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영화 산업도 '영화 산업이라는 게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지만 영화 산업 육성하는 펀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돈을 내고 문체부도 돈을 내는데, 그래서 키운 게 아니라 우리 영화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뭔가 정부 시스템에 또 국회의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게 국내 영화시장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다루지도 않은 채 지금 몰두하고 있는 미디어방송통신위 설치법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칙에 있는……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방통위를 그대로 이어 가는 겁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몇십 명 정도의 공무원들만 옮겨 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다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새롭게 제정된다고 하면서 위원회는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직자들을 전부 승계한다 그리고 과기부의 한 이삼십 명 될지 얼마 될지 공무원들을 새롭게 공직자로 한다 이 내용이 부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딱 괄호 열고 하나, 단 정무직은 제외한다.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가 초래했던, 정부 여당이 초래한 금융위·금융감독원 체제 개편에서는 그 법에는, 당초 정부가 상정하려고 했던 그 법안에는 정반대입니다. 새로 개편되는 금융감독 개편 위원회는 기존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모두 승계한다. 금융위원장도 승계한다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협의체기구인데, 합의제기구인데 합의제기구인 정부기구에서 한쪽은 그 수장만 배제한다라는 것을 부칙에 넣고 다른 쪽에서는 다 승계한다 이렇게 넣고 그때그때 다른 부분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법안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긴급성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빨리 교체하겠다. 지금 탄핵소추를 해도 살아 돌아오고 수사를 해도 꼼짝하게 할 것도 없고 또 적당히 알아서 물러나 줬으면 좋겠는데 단호히 헌법상의 임기를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법으로써 바꿀 모양인데, 참 이것도 수포로 돌아갈 일이고 이것도 허사로 돌아갈 일이기 때문에 단념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안 읽어 보셨는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걸 지금도 고장 난 레코드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위 설치법에서 그 긴급성과 시급성의 단 하나의 이유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 그것 무망한 이야기고 위헌적

이라는 사실을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봐 주십시오.

이게 언제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즉시 직무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12시간 넘어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행히 시간을 넉넉히 하라고 하셔서 제가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시킨 헌법재판관들은 새로운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 1월 23일 2024헌나1번 사건입니다. 헌나 1번인, 헌나가 탄핵소추 사건 같은데 2024년에 제1호 탄핵소추 대상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습니다. 그전까지도 누굽니까? 이동관 또 앞에는 김홍일 이런 분들 계속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탄핵을 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업무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동결되니까 그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당해도 기각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났고 그래서 급기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2025년 1월 23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과 관련 1. 두 사람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 2.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3.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4.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따진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4인의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내고 4인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4 대 4가 되기 때문에, 6인 이상이 인용을 해야 헌법재판은 인용이 되는 거지요. 탄핵 인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용되기에는 2명이 모자라는, 당연히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용의견을 냈던 이분들도 참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편향이 있었습니다만 그 요지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정말 통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 드릴 텐데…… 아니, 국회는 왜 3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의 가장 큰 이유가 된, 5명의 방송통신위원 재적 중에서 2명만 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3명의 방송통신위원이 없어서 항상 2명만 결정했던 것을 가지고 탄핵의 이유로 삼았는데 4명의 재판관님들은 '그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정을 하셨고 4명의 재판관들도 똑같은 이유인데 '5명인데 2명이면 이상하지 않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로 인용의견을 내셨습니다만 그 책임은 결국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헌법재판관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대행 하셨던 분이지요. 그다음에 김형두 재판관, 하필이면 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김형두. 한자도 똑같더라고요. 김형두 재판관의 결론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 과정에서 국회 측, 당시 국회 측은 탄핵소추인 대표자가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하고 김형두 재판관이 '아니, 지난 7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가 의결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임명해 주지 않아서 공석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다 인정되는데 그러면 그로부터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 뒤로 국회는 3명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결하지 않으십니까?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결정요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입니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이것 기각되었습니다.

또 하나, 피청구인이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 했는데 그 부분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하고 방문진 이사, 한국방송공사하고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많이 지체될 수가 없어서 임명 절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5명이 해야 될 걸 2명이 했다고 전부 이의를 신청하고 급기야 그냥 그 사실만 가지고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걸었고 탄핵소추가 되는 즉시 업무가 중지됐던 것이지요,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했는지, 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입법자는 한국방송공사와 방문진 이사의 추천·임명에 관하여 방통위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사 추천·임명 행위가 방송법 제46조제3항—이게 KBS 이사를 선임하는 조항입니다—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항제4항—이것은 방문진, MBC의 공영방송 이사를 규정하는 규정입니다—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여기에 대해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의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인용의견도 따지고 보면 동전의 다른 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5인 재적위원을 했으니까 3인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5인 미만의 위원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건 맞는 이야기지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 그러면 국회가 왜 방송통신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 있도록 국회가 강요해 놓고 거꾸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니까……

그런데 이 재판관 네 분은 짐짓 그것 모른 체…… 실제로 문형배 재판관은 물었어요, 그날 그때 그 재판 과정에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가 방송통신위원 3명을 추천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한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인 제공자가 소추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인 편향과 소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 셈이지요. 말은 그런데, 그렇게 소추한 국회가 실제로 3명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공백을 왜 피소추인 이진숙 혼자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관 김형두가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심의·의결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은 기각의견에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청구인이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국회가 다 안 해 놓고, 국회가 사람을 충원 안 해 놓고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책임을 다 덮어씌웁니까?' 이게 김형두 재판관의 요지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이렇게 판시하고 최형두가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또 다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법률적인 용어여서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뒤에 소송이 막 이어지니까 법원에서 일부 사건은 방통위의 결정을 인용하고……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기가 다한 MBC 방문진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 또 임기가 다한 KBS 이사를 새롭게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더니 KBS는 그게 이유 없다 그래서 다 임명이 됐어요. 됐는데, MBC 방문진은, MBC라는 것은 형식상 주식회사로도 되어 있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또 의견이 다른데 그 법원의 결정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명이 있으면 적어도 3명 이상이 결정해야지 2명이 결정한 것은 가처분의 실익이 있다 해서 가처분 결정을 해 놓은 건데 본안 판결에서 따져 봐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본안 판결도 가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었고 그리고 숫자를 따지자면 국회가 3명을 충원 안 해 주는데 무슨 방법이 있냐고, 국회가 빨리 충원을 해야지……

그런데 가처분을 인용한 까닭은 이게 뭔가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새로운 이사가 임명되면 그전 이사는 물러나야 되니까 그전 이사가 이익이 있다, 그것도 참 법리적으로 따지기 힘든 사안입니다. 임기가 끝난 사람이 자기가 할 게 아닌데, 왜 임기가 끝난 사람이 물러나면 되지, 그걸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이사가 내가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해야 될 일이지. 그것도 참 요령부득의 가처분 결정이었습니다만 이 재판도 본안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컨대 모든 사안의 근본에는 5명의 방송통신위원 중에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방송통신위원을 국회가 추천하지도 의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당은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상정을 안 시켜 줍니다. 민주당은 당시에 2명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서 의결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왜? 2인 체제를 방치해 놓고 2인 체제의 결정이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탄핵까지, 계속 앞의 김홍일 위원장 때 탄핵 협박 또 이동관 위원장 때 탄핵, 탄핵, 탄핵 이렇게 겁박만 계속 이어 왔던 것이지요. 그 탄핵소추 이유로 삼기 위해서 민주당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2명도 추천하지 않고 우리 당의 추천은, 우리 당은 소수당이니까 혼자서 상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추천위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방송통신위원 3명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형두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 말처럼 그냥 일 안 해도 되는 곳입니까?

KT·SKT 이런 해킹 사태 나면 절반의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쪽이니까요. 과기정통부하고 KISA, 국정원 뭐 이런 데 다 있습니다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일이 전부 중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통신 규제가 없어서 오히려 통신이 좋겠다고 그러는데 또 진흥책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를 둘러싼……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 제공은 국회가 5인 중에 3인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의결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그 공백을 두고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걸고서 그 2인 체제의 책임을 몽땅 물어서 '니가 네 죄를 알렸다' 해서 헌법재판을 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업무 중지를 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단 말이에요. 이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책임이 아닌데 왜 혼자 독박 쓰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기각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2인 체제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끝없이 지금 가처분신청이 되고. KBS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그건 이유 없다, 그냥 KBS 이사 임명이 되었고. MBC는, 방문진은, 또 다른 재판부는 '그것 5명이 해야 될 걸 2명이 했으면……' 뭐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한번 실제로 임명이 돼 버리면 이 가처분신청을 낸 사람들의 이익은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처분하자 그래 놓고 본안 판결은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임기가 다 끝난 MBC 이사장, MBC 이사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 임명한 사람들이냐 하면 다 이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염치도 없는 일이지요. 이사장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물러나야 됩니다. 임기 다 끝났는데, 후배들도 MBC 이사장 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MBC 출신들이 MBC 이사가 되어서 MBC를…… 정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원조가 과거 KBS의 드라마 왕국이자 KBS의 엔터테인먼트 연예제국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이전에 임명된 사람들이 이사로 앉아서…… 이것이야말로 염치없는 것 아닙니까? 그 가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은 아직 끝없이, 그 본안은 빨리빨리 판정이 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축출, 교체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충분히 따져서 기각된 것이고 똑같이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는 부칙 조항으로 헌법상 그 임기가 보장된 공

직자를 교체할 수 있느냐라는 매우 위헌성이 뚜렷해 보이는 그 문제점이 이제 다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초기에 뚜렷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거의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른바 2인 체제 때문에 방문진 이사 임명을 무효로 하고 그 가처분을 기각했던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의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의 위반 여부.

법규범의 의미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러나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규범의 문언이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재적(在籍)—그러니까 있을 재 자에 학적 할 때 적 자 쓰는 재적—은 어떤 단체에 적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의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통위의 의결이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것은 2024년 5월 30일 자 2023헌마820등을 참조한 것입니다.

'또한 방통위법은 제13조제2항에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인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총 2인이었으므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다.

방통위법 제4조가 방통위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신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의 대원칙하에 서로 다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사안을 규율하도록 하여 방통위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정 위원 수인 5인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로부터 방통위 심의·의결의 전제조건으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 해석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또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간,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이 이

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여권에서 추천한 1인, 야권에서 추천한 2인으로 방통위가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위원의 추천, 지명 내지는 임명에 있어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방통위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의 3년 임기와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위원이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각 위원의 퇴임 시점, 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와 그 시점, 위원 2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와 그 시점, 대통령선거에 의한 여야 교체 여부와 그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방통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도 결국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은 5인 체제지만 여기는 상근 3인, 비상근 4인으로 해서 7인 체제를 두고서 역시 비슷하게 대통령과 국회 여야가 일정한 몫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하면서 실제로 정작 중요한 미디어·방송·통신의 융합 거버넌스는 도외시했다는 것이 이 법안의 문제점인 것이지요.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회 추천 3인이 모두 공석인 경우는 물론, 재적위원 3인이 대통령 지명 위원 2인과 여권 추천 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정권이 교체되어 종전 여권이자 현 야권 측에서 지명·추천한 위원 3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통위는 2023년 8월 25일 당시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었을 즈음부터 위원 3인에 대한 국회의 추천 내지 대통령의 임명 불발로 인하여 10개월 이상 2인 체제에서 운영되었다. 그동안 방통위는 국회에 위원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최 누구 후보자가 추천되었다가 임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이후로는 추가적인 추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방통위는 피청구인이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여 왔다. 그동안 이루어진 심의·의결 대상에는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등등'…… 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 정부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추천했으면 그것이 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판단해서 임명 여부를 판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당시에 아마 쟁점이 이해상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상충.

방송통신위원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매우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전 분야의 규제, 인허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 분야에서 직전에, 우리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직을 맡으면 자신이 직전에 있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지원책 또는 인허가라든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엄밀한 이해상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통신은 자격이 매우 엄격합니다. 15년 이상의 공직 경험 등등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준하는 능력, 학자이거나 헌법 법률가이거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예컨대 어제까지 통신사에서 임원 하던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이 되면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통신 회사가 승복할 수 있습니까? 어

느 통신사를 봐주기 위한 결정이다 이러겠지요. 그것 때문에 이해상충, 영어로는 COI라고 하는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conflict of interest)는 매우 중요한 공직 임명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국회의원 되면 매년 등록합니다만 직전 3년간 혹은 직전 5년간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다 신고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 배정도 못 받습니다. 예컨대 내가 어느 회사에 있었다면 그런데 그 회사와 관련된 것이 내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예산과 법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아마 연락을 받을 겁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것은 정부 구성의 원리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시에 그런 쟁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마 그 후보자가, 국회에서 의결한 분이 그 직전에 무슨 통신협회 같은 데서 상근부회장을 했던 것이 이해상충 아니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국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법제처가 아마 그 당시에 그 해석을 했던 모양인데 빨리 유권해석을 해 줘야지요. 이것은 난처하다, 엄밀히 따져 보면 이해상충이 분명하므로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국회가 의결했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곤란하고 정치적 결정을 정부가 뒤집기 어렵다면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되 이번의 경우는 국회가 의결한 바 있는 만큼 지체할 수 없어서 임명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될 일을 갖다가 가타부타 말도 없이 7개월 동안 놨습니다. 그러니 그 당사자가 느꼈을 절망감과 열패감은, 절망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빌미가 되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추천·의결해 봐야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안 하겠다 하면서 2인 체제를 유지시켜서 탄핵소추로 이어지는 이런 빌미를 준 사실도 저는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방통위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같았으면 야당이, 당시 민주당이 2명의 훌륭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견제도 하고 의견을 절충해 가면서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을 흑백으로 가르고 선악으로 나누고 합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서 의결해서 5명이 만일 방송통신……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 한 분은 법률가였습니다, 또 판사 출신이고. 또 민주당이 추천할 훌륭한 두 분의 방송통신위원 또 우리 당이 추천할 위원. 위원이 이렇게 5명이 있으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겠지요. 그게 합의제 기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팽개치고 3명을 끝내, 우리 당이 추천해서 국회가 의결해야 될 한 몫까지도 이렇게 그냥 묵살하면서 3명을 공석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불가피성을 헌법재판소도 다 여기서 실제로 문면상 그런 규정이 없고 그런 사실이 이런저런 전후 관계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렇다면 왜 국회는 국회 몫 방송통신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따끔하게 더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새겨볼 여러 대목이 많은데 법률용어이고 그 핵심은 제가 설명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독회를 멈추겠습니다.

헌법재판 결정문에 보면 민주당 추천했던 헌법재판관이시기도 하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유를 들어서, 똑같은 사안인데 동전의 다른 면을 강조해서 이것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재판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탄핵 사유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함으로써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최우선으로 취하였어야 하는바, 먼저 국회에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촉구하는 등 2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건 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방통위원장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방통위원장으로서 당연히 5명에 3명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말 한마디 했겠지요. 그런데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그 탄핵소추당한 피소추인한테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함으로써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최우선으로 취하였어야 하는바’, 그러면 다 끝난 임기의 MBC 방문진 이사하고 KBS 사장을 그냥 두고 방송통신위원 5명 구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취지 같은데 그건 앞에 탄핵재판 과정에서 문형배 소장권한대행과 김형두 재판관이 했던 이야기랑도 상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틀 만에 탄핵당했는데 어떻게 국회에 방통위원을 추천하도록 2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의무를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탄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논의해서 뭐라도 하나 만드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필리버스터 어차피 24시간 내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180석으로 끝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다수결에 밀려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 사실 안건조정위원회 이거 우리 당이 의석이 180석 가까울 때 도입한 겁니다, 그때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왜냐하면 동물국회, 다수결로…… 다수결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건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도 안건조정위원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걸었더니,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그 취지상 다수당과 소수당, 결국 원내교섭단체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내교섭단체만 지금 상임위를 배정받고 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한 번의 경우는 그나마 비교섭단체도 없어 놓으니까 자당 위원을 탈당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비교섭단체로 해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3 대 3을 해야 될 것을 4 대 2로 만들어 놓고 이래 놓으니까……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국회가 만들었던, 그나마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 조금 결정이 늦더라도 합의를 해 나가면서 하자고 했던 그 좋은 취지의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취지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래서 사실 요지를 말씀드리면 하루씩 늦추자는 겁니다. 늦추는데, 이 법은 하루만 늦출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정부 여당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50여 건의 이른바 민주당식 개혁 입법을 제출하려는 모양인데 그 법 하나하나가 우리 당으로 볼 때는 전부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57건을 다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주 힘드실 겁니다, 매일 저녁시간에 180명이 모여 가지고 이걸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국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장치다, 그나마도 매우 무력하고 소극적이지만. 그래서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한 건 한 건 좀 꼼꼼히 따져서 해 봅시다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호소고, 우리가 앞으로 이걸 오십몇 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열 명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사실은 이미 다 의사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상대로 이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행히 국회방송이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소수당이 되어서 그동안 말할 기회도 없었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도 했다가 바로 끝내 버리고 해서…… 원래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인가 이렇게 계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3 대 3으로.

저는 그게 우리 국회가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치였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선진화법의 요체는 한편에서는 헌법이 정한 예산, 정부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이번에 해 줄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은 30일 전까지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 또 반면에, 예전에는 야당 되면 그거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상 점거하고 심지어는 막 최루탄도 의장한테 던지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없앴습니다. 동물국회의 참 잔혹상을 사라지게 한 대신에 좋다, 그러면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가 그걸 만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한 80석밖에 안 되고 우리 당이 180석 가까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또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에서 하도록 하고 1당은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국회의장을 선출해서 뽑고 그렇게 원칙을 지켜 나가고. 그걸 하시자고 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셨거든요, 야당 총재 시절에.

세계에서 드물게, 사실은 우리도 처음에는 미국 의회식으로 위너 테익스 올(winner takes all), 그러니까 한 석이라도 많으면 그 정당이 과반을 넘으면 상임위원장도 다 차지하는 방식이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선진적인 것, 그러니까 의석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일부 상임위를 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협치를 하자는 원칙과 전통을 정했고 그 기둥을 확실히 만든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였는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무력화되고 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마도 그냥 이 법 몇 개만 할 것 같으면, 오늘 저희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 법안 자체 하나를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법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법안을 하루아침에 하룻낮에 그냥 표결로써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루씩 하루씩 막아 가면서 정부 여당에게 다시 숙고해 주기를 호소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이렇게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 참 필리버스터 하자고 해 놓고 자기들은 자리 다 비웠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

자면 우리는 매우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소수당이 되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입법을 의석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한테 최루탄을 던지고 이런 야만적인 방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의 요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이 달리 저지할 방법도 없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도 번번이 이렇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당의 의원을 탈당시켜서까지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3 대 3으로 해서 최장 90일 동안, 최장 3~4개월 동안 숙의한 뒤에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그때 비로소 다수결로 하자라고 했던 그런 좋은 취지를 다 이렇게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도 그렇습니다. 이 법안도 좀 숙의를 하자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 법안을 숙의하자는 것은 우리 당 의견뿐 아니라 진보적 언론단체,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쇼크, 그 충격, 그 환희, 여기서 열광했던 많은 분들의 '그렇게 좋은 콘텐츠를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왜 돈은 외국 사람이 버나.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국회는 왜 이런 걸 뒷받침 못 해 주나'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고 호소하고, 다수결에 밀리니까 '그렇다면 안건조정위원회를 한 번 해서 한 90일 동안 상의를 해 봅시다'라고 호소해도 다 묵살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앞으로 이런 법안이 50개 더 남아 있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지 않으면 50개를 하루아침에 하룻낮에 다 할 겁니다. 그 후폭풍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도 지금 몇 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미디어방송통신위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도 다른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묵살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내부에서 토론을 하고 요즘 정치 상황에서 입바른 소리 했다가 정말 팬덤에 있는 그런 열성·극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면서까지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용감한 발언을 해 주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실 때도 하루아침에 거의 토론도 없이 그냥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모든 법안을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유혹에서부터,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십몇 건을 하려면 오십 며칠 동안 여러분 매일 국회에 이 시간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법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또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야당과도 협의하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달라는 그런 마지막 소극적 수단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다 앉아 있어야지. 왜? 왜냐하면 우리는 최장 50번 이상의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추석 앞둔 주말이고 하니까 일부는 귀향 활동을 하시고 일부는 여기서 순번을 하루에 세 차례, 네 차례씩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밖에서 잠깐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 더러 많은 언론에서는 이런 장면을 찍고서 필리버스터 한다

면서 아무도 없는, 야당 의원 1명밖에 2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수십 건, 50건이 될지 60건이 될지 모르는 이런 무리한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서기 위해서……

여당에서도 이것을 하시려면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은 매일 오후 시간에 다 국회에 모여서 필리버스터 하나하나를 해제하려는 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법안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약 민주당 의원님들이 골탕 먹으라고 추석 연휴 때 그냥 필리버스터 해제하지 않고 국회를 안 나오시면 계속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우리는 해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까지, 추석 때까지도 그럴 경우에 국회에서 일하시는 여러 분들이 참 힘드실 텐데……

민주당 의원님이 추석 연휴 전에 이것을 끊어 버리면 다음 본회의 때 또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때 상정되면 그때도 하나하나씩 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분명한 의지는, 지금 이 법뿐 아니라 앞서 통과시켰던 방송법 또 노란봉투법 이런 법들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또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우리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 또 우리 헌법 구조에 미칠 영향이 너무 심대합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하나 좀 심사숙고해서 합시다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룻저녁에, 하룻낮에 오십몇 개의 그런 법들을 일제히 통과시켜서 국민 생활, 국민의 헌법, 정부 구조라든가 갑자기 검찰청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될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 한 타임에 한 10명씩 정도 나와 있고 지금 밖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지켜봐 주시는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저 최형두라는 사람이 저렇게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또 넷플릭스 같은 것 이야기도 해 가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취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가 끝난 KBS 이사, MBC 방문진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방송통신위법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보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틀밖에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힘들다라는 것이 요지였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라는 이유가 탄핵소추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왜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3인 추천은 국회가 안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원인 제공에 대한 문책도 따져 묻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각 사유는 죽 있습니다. 죽 넘어가시지요.

2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개정 방송법도 내일 아마도 의결하시려고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칙 조항같이 방송법이 통과되면 KBS 이사·사장이

모두 다 이제 물러나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BS의 임원이, 사장과 부사장이 헌법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헌법소원 청구서—이게 위헌이라는 이야기지요—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과 김 부사장의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지요.

방송법, 이것도 부칙입니다. 참 부칙을 통해서 임기를 보장해야 될……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여야를 바꾸면서까지 또 정권이 교체되면서까지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면서까지 지켜 온 원칙을 강조한 것은,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고 했던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정권 바뀌면 탄압해서 물러나게 하고 했던 것이 그것이 오히려 폐습이자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헌법이 정한 공직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계속 반복 누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법 부칙을 바꾸어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부칙을 바꾸어서 부칙을 통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축출하는, 교체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방송법에는 KBS 이사와 사장 등을 정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다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이사장과 사장이 구성되면 즉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15조에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헌 소송에서 구 방송법—원래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25쪽 보겠습니다.

방통위 개편법도, 지금 이번에 오늘 제가 반대토론하고 있는 이 법안도 그렇습니다.

국보위법 부칙 위헌 조항…… 이것도 바로 부칙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척,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똑같은 기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이삼십 명 더 데려오는 정도로 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승계되는데 정무직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항은 1980년에 국보위가 법을 만들면서 당시 공직자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칙조항처럼 위헌적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초법적 입법기구는 국보위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칙을 통해서 기존의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기를 만료시켰습니다. ‘국회 사무처·도서관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 그래 가지고 새롭게 국보위 설치 이후에 국회 사무처·도서관 소속 공무원들을 다 축출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 대통령직선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당시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국회가 정말 민주적 기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내렸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보위법 부칙 제4항입니다.

지금 KBS 사장과 KBS 임원이 제기한 방송법 부칙조항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칙조항 역시도 국보위법 부칙 4항과 같은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의 흡사하다, 이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칙조항에서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는 것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의 예에 해당한다,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칙 제4항은 공무원에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면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의 관계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당시에 국보위법에 의해 국회 사무처·도서관의 조직적 성격이 변경되지 않는다.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적 성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점 하나 찍는 그런 정도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급입법으로 인해서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이 침해됩니다. 그리고 귀책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부칙으로 박탈해서, 법적 지위가 있는데 그 법적 지위를 부칙으로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일 이 법이 시행된 뒤에 이 시행 방식으로 해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한다고 할 경우에는 똑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서둘러 하시는 것 같은데 위헌결정이 예견되는 법안을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관인데요 이는 민간 자율기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여서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서 탄핵하겠다는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 단체에서도 이것은 정부가 정무직 공무원을 통해서 방송·통신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벌써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그냥 넣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벌써 정부가 바뀐 지가 100일이 넘었고 또 이전에 사실상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에 있어서는 거의 여당이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심의위원을 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 놔 가지고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의 큰 위협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이후, 지난 6월 4일 날 그나마 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하도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뭘 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본인이 지쳐서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를 개최하려면 필요한 위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있어야 되는데 류희림 위원장이 그만둔 뒤로 정족수 미달로 지금 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새롭게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주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라는 것은, 지금 디지털상에 성착취물이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고를 하면 신고를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자율규제든 뭐든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명령이 떨어지고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성범죄소위를 열지를 못하니까 디지털성범죄 정보 2만 8000건 중에서 약 1만 3000건이 심의 대기 상태로 방치 중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 게시글의 시정요구가 무려 4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때문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성범죄, 주로 젊은 여성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지도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기능을 거의 중지시키다시피 해서 민생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일 텐데 이런 성착취물, 디지털상의 성착취물로 인해서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빨리 고치지 않고 왜 이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방심위에는요 도박, 마약 같은…… 이게 방송·통신,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의…… 방송 심의하는 것도 있지만 허위 조작 뉴스라든가 또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뉴스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거나 적대적 증오감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지금 거의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도박, 마약 같은 불법·유해 정보 차단 심의도 담당하는데 이 역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같은 이런 것들은, 유해 정보 같은 경우 연평균 약 5만~7만 건 접수됩니다. 월 약 7000건이 접수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해 줘야지만 이 도박…… 요즘 도박 때문에 젊은 학생들, 학교 다니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도 지금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서, 국회가 이 일을 방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 마비로 인해서 심의 대기 추정치가 약 2.2만 건입니다. 방심위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여당일 때는 우리 책임이라고 해도, 사실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가, 더구나 다수당인 국회가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다수당이 있는 국회가 차지 않음으로써 소수 여당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다수당이자 여당이 되었는데도 방치함으로써 이런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이런 전혀 새롭지도 않은,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고 또 우리 방송과 영화산업을 새롭게 진작시킬 수 있는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서 육성과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 지금 단 한 사람 축출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작 임명했으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화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상화되어서 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디지털상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구제해 주지 않고 도박, 마약 같은 이런 불법·유해 정보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일반인들이 병들고 멍들고 피해를 입는 확산 사태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국회가 지은 죄가 큽니다. 보통 우리가 범죄를 이야기할 때 작위에 의한, 억지로 무엇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일으킨 것도 있겠지만 이처럼 부작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딸, 우리 어린 조카, 성착취 대상이 되어서 디지털상으로 버젓이 그 정보가 돌아다닐 때 그 가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들을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여당이 많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중지시키고. 왜 중지시켰느냐? 방송통신위원회 개편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무슨 정무직으로 만들고 뭐 어쩌고어쩌고 해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발상대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국회의 부작위, 국회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될 것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아니고요,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빨리 임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통신사 해킹 사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미국의 FCC 같은 곳과 협의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통신사 해킹이라는 것이 국가 배후의 조직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이 당하는 해킹과 한국 통신사가 당하는 해킹이 주체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팀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고 통신사들도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정보를 공유해서 이른바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Data Breach Investigation Report)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침탈당했습니다' 이런 신고를, 피해를 스스로 신고합니다, 다른 통신사가 그 피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다른 일반 가입자들이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신고를 합니다. 스스로 자진신고하고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신사들은 숨기기 급급합니다, 우리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이 조짐이 이상하다고 침탈당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통신정책을 만들고 진흥하는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런 보안을 담당합니다만 통신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통신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무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에서 계속 비판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냥 스스로 물러난 뒤에, 그 자리를 그러면 빨리빨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여당이 채워 줘야 됩니다. 안 채워 주고 있습니다. 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할 때 한꺼번에 사람 다 갈아치우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 진보 단체들도 걱정하고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좀 더 숙의해야 된다. 특히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방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방송·통신 심의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법을 강행하고 내일 그냥 표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이 법이 미칠 피해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진보 언론단체, 시민단체도 걱정하는 일을 이렇게 서둘러 하십니까?

27쪽 보십시다.

이게 아까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으면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아니, 왜 최민희 위원장, 당시에 방통위원이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이신데 그 이전에 방송통신위원으로 사실 민주당에서 후보로 추천했고 국회에서 의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전 정부가 7개월 동안 임명을 공식화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최민희 위원장이 그냥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그 뒤로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우리가 의결해 봐야 전부 대통령이 임명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더 이상 안 하겠다 해서 민주당 몫 2명은 물론이고 우리 당이 해야 될 1명 몫까지도 그냥 몽땅 싸잡아서 추천도 못 하게 하고 의결도 안 해 줘서 지금 5인 체제가 2인 체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뜻은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그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음 29페이지는, 그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금 마비 상태에 있어 가지고 통신심의정보인 불법·유해 정보가 지금 굉장히 많이, 12만 건 19만 건, 근 20만 건가량. 또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지금 3만 건가량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상황, 이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0쪽 보십시오.

이게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우리 과방위에서…… 아니, 한겨레신문과 진보 언론,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맞다, 이전에 10여 년 전에는 20여 년 전에는 방송·통신 융합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미디어방송통신, 그보다 더 큰 대융합, 더 큰 컨버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같이 논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청취한 미디어학회들 의견도 그렇고 또 한겨레 같은 진보적 언론도 지금 1면에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매몰돼서 내실 놓치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31쪽 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계속 미디어방송위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이 법의 이름입니다. 약칭 방미통위네요, 방미통위. 방통위는 폐지하면서 방미통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신문의 사설 같은 것 보시면 여러 신문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숙 한 사람 쫓아내려고 방통위 허무는 법까지 만든다니' 뭐 이런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겨레신문도 그런 것을 냈지요.

그러니까 방미통위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방미통위라는 것은…… 과거의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라는 2개의 영역을 새로 융합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든 것인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여기에 OTT도 들어가고 새로운 미디어의 대변혁이 들어가면서 엄청 더 큰 컨버전스와 또 엄청 큰 거버넌스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할 때만 해도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실 산하에 이런 정부 산하 특별기구를 두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일거에 밀어붙입니다.

33쪽 보시지요.

'여당 언론개혁 입법, 속도전 말고 소통하라', 한겨레신문이 거의 뭐 연일 지금 이런 것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 과방위에서 '이런 진보 언론도 이렇게 하고 우리도 지금 방미통위가 아니라 거대한 미디어 융합에, 이런 미디어 컨버전스에 대응하는 더 크고 더 스마트하고 우리가 더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케데헌의 그 모멘텀을 살려서 우리 미디어·방송·통신을 더 크게 육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같이 논의합시다. 3개월 시한을 정해서 논의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한겨레신문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겨레신문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합니다' 이런 답변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 중에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단체가 어디냐 그러면요 시민단체 이런 곳인데 전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우리 당하고는 거리가 먼 단체들입니다. 우리 당을 비판하는 단체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 단체가 걱정하는 것이 또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25일 날 이것 하지 마라, 늦추자라고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장하는 요지가 사실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드러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폐쇄적 논의만으로 입법을 강행하려는 잘못된 절차에서 비롯한 필연적인 결과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조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멈추고 시민단체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틀에서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문화대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창작자들과 우리 제작자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줍시다, 그런 법을 만듭시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켰지만 이분들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시민단체들도 민간기구인 방심위를 행정기관화해서 정치적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본회의 처리하는 것을 제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서 하루를 멈춰 세웠습니다만 그것

하지 말자, 늦추어라, 속도전 하지 말고 소통하자, 시민단체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더구나 이 국민의 목소리도 우리 당을 편드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심야 시간에는,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이 저녁에 좀 쉬고 그동안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심야에도 저는 계속할 겁니다. 하면서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할 수 없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런 입법 폭주를 보면서 걱정하는 내용들도 담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중의 하나가 '법치와 자유'라는 책을 마침 제가 오늘 찾았는데 이게 한국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언론인이 편집인입니다. 하종오 편집인이 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글도 소개도 하고.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는 그때 방송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방송법에서 특정 진영,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광우병 사태 때, 지금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에 해서 지금까지도 없는데 결과가 났는데 아직도 광우병 파동 주장하면서 자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전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MBC 사장이 되고 MBC의 보도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당시의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라고 하는 원대한 국가전략에 치명적인 손실을 안겼다는 사실도 하면서, 그런데 그런 편향된 세력들이, 사람들이 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것들을 새로 통과시킬 방송 3법이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것은 마치 지금 AI에서 혹은 소셜미디어, 디지털미디어에서 어떤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보니까 자꾸 적대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트래픽을 높이려는, 영업적 이익을 높이려는 빅테크들의 알고리즘이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유발 하라리 책을 소개를 많이 했는데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라는 신간을 출간하면서, 이분은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도 만나기도 했지요. 국회 사랑재에서 만났습니다. 최근에도 또 다른 분 만나시고 했던데.

유발 하라리가 걱정하는, 출판 기자간담회 2025년 3월 20일 날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독재로 바꾸는 일에는 일종의 매뉴얼이 있다. 첫째, 자유언론을 파괴한다. 둘째, 사법의 독립을 파괴한다'.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주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또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거센 공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걱정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를 출간하면서 했던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저희들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이 바로 언론의 골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해서 다시 한번 더 숙고해 주고 이번에 표결하지 말고 더 연구하자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정은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민주주의에

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공화국 'The Republic'이라는 책 8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비록 하루밖에 저지 못 시키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지금 절대다수당인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 유혹에 빠져서 수많은 법들을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새워서 그리고 앞으로 몇십 일간에 걸쳐서라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멈춰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왜? 지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다수결로 다수당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라서 그렇지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 차이는 5%p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의석은 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선거제도를 같이 쓰는 게임 룰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국민의 뜻이 적어도 지금 국회 의석수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도 소수당의 의견을 살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에서 만들었던 대로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90일 정도의 숙의는 같이 하자 그런 취지인데 그것이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다시 유발 하라리의 그 말이나 또 플라톤이 2500년 전에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고 또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었습니다만 그전 정부 또 우리가 다수당일 때 우리도 잘못한 것이 많지요. 그런데 그걸 더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폭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 경고가 바로 유발 하라리나 플라톤의 말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폭주가 되지 않도록 저는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며칠 몇 밤에 걸쳐서라도 다수당인 여당이 모든 법안을 순식간에 생각나는 대로 그 엄청난 외교·안보 또 경제·민생·사회, 우리의 전통 가치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생각지 않고 밀어붙여서 다수결의 힘을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실제로 21대 국회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요. 그때 민생을 보호한다고 민주당이 당시 7월에 했던 법안이 임대차보호법이었습니다. 좋은 취지였지요. 저도 서울에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지금은 팔았습니다만, 마산에만 집이 있습니다만 결혼 이후에 한 삼십몇 년간 서울에서 전세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전세임대차를 보증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완전히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임대차보호법, 그때 윤희숙 그 당시 의원이 '저도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이것은 큰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민생을 위한 좋은 법이라고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세대란이 났습니다, 전세대란.

야당도 국정을 경험해 봤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칠 부정적 효과,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는 너무 극단적인 또 당내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 강경한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그것이 당내 경선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 그 경선으로 선출된 지도부가 의원들을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합리적 사고는 줄어들고 국민들의 다수의 뜻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당에

도 똑같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당의 이런 입법들, 이게 언론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언론개혁이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당이 볼 때는 이것은 언론개혁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하나씩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또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에게 좀 더 많은 정보와 좀 더 많은 글로벌한 식견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글로벌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을 미칠—그것이 바로 BBC 방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그런 방송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떤 방송사 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 구조로만 만들고 그럴 경우에 국민의 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의 방송이 되겠지요.

이것이 저희들은 민주주의를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의정치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부여한 권한을 전혀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몰아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언론이 글로벌에서의 영향력이나 또는 글로벌에 어떤 문화적 큰 효과, 어떤 케데헌 효과는 고사하고 점점 더 진영의 방송으로 초라하게 몰락해 가는 그런 일을 방치하는데 그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자유 언론을 파괴하는 일이고 방송편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일이다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방송법 토론회 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멈춰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저녁 때 심야에는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좀 더 큰 문제, 왜 이 미디어 방송통신이 아까 얘기한 케데헌의 모멘텀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여야가 더 힘을 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아 가는 법이 되지 않고 이렇게 파편적으로 특정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서두르는가 이것을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지금 절대다수 여당의 이런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무엇인가,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좀 더 평정심을 찾고 좀 더 균형 감각을 찾아서 위기에 처한, 지금 벌써 관세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되돌이켜 보는 그런 거대 담론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소견을 되풀이해 봐야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안겨 줄 수 있고 해서 석학들의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여야의 동료 의원들과도 나누고, 혹시 밤늦게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다시 한번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을 오늘 이 법의 무제한토론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토론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 또 실제로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 저와 저희 당의 의견 또 어떤 방면으로 돼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또 예컨대 영화산업 같은 경우는 K-무비, K-컬처의 근본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거버넌스 시스템의 어떤 분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50억, 문체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국이라든가 다른 큰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재원을 가지고는, 그런데 그런 재원인데 그것조차도 분산되어 있고 규제는 첩첩이 둘러쳐 있는 이런 환경으로는 우리 미디어와 방송과 통신을 키울 수가 없다, K-컬처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진정한 방송·미디어·통

신 융합 거버넌스를 만들자. 그런 것들은 제 의견일 뿐 아니라 우리 당의 의견일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입법조사처가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입법조사처 자료는 참고로 제가 낸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이 요청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를 굉장히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쪽 보여 주십시오.

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이라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정책 능력에서 항상 정부보다 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아 왔는데 최근에 저는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의 이런 연구보고서, 특히 이 보고서가 길지 않고 한 몇 페이지짜리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국회의 의회 활동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상당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입법 능력을 높이는 첩경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이런 국회입법조사처라든가 미래연구원에 대한 또 국회운영위원회가 함께해서 더 고급의, 더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들에서 거의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슈와 논점이라는 것이 너무 두꺼운 논문으로 되면 하루하루 수많은 국회 회의와 또 지역 행사에 매여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매우 짧게, 보통 한 4페이지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싱크탱크 혁명을 일으켰던 헤리티지의 경우에는, 헤리티지가 영향력을 미친 것은 엄청난 정책적 능력 그런 것도 있지만 정책의 핵심을 메모랜덤 형식으로 의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했던 데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헤리티지,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라고도 불렸는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 싱크탱크 생태계를 특별히 많이 연구해서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소개하자면 저로서는 참 큰 추억 중의 하나인데, 어차피 필리버스터고 오늘 밤새워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발전하려면 우리 국회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그냥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고 또는 어떤 특정한 경험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폭넓은 글로벌 사례 또 폭넓은 지식 같은 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크탱크도 국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당에서는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우리 당은 여의도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싱크탱크의 재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정당법상 국고가 보조되는 국회 정당 사무처의 인원이 100명인가 200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들을 기용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독일처럼 싱크탱크 재단을 만들어서 정책들을 좀 더 활발히 연구한다면 우리가 국회의사당에서 또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을 둘러싸고서 생경하게 서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사전에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더 단련되고 더 나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국회사무처에 근무할 당시에, 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이었는데 당시의 국회사무총장은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의 반발도 있고 우려도 있었지만 국회에서도 좀 중장기 국가 전략을 내다보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국회미래연구원입니다. 지금 김기식 원장이 와서 의장님과 함께 새로운 중장기 전략, 지금 정부나 국회가 천착하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하는 이슈와 논점은 중장기보다는 그 해에 지금 당장 문제 되고 있는 법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국회사무처의 전문가들이, 주로 박사급 연구인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잘 정리했는데, 정리도 잘돼 있지만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35쪽 봐 주십시오.

이게 한 한 달쯤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도 그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맞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래된 규제 체계에 따른 미디어 관련 사무의 비효율적 분산, 새로운 미디어플랫폼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위원회 조직의 위원 부재로 인한 기능 수행 불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문, 라디오,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로부터 인터넷동영상서비스—즉 OTT지요—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확장된 미디어 플랫폼 환경으로 변화된 현재 달라진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만큼이나 미디어 규제체계와 거버넌스 전반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건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오래된 방송이라는 개념과 플랫폼별 규제의 틀에 갇혀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만 대응하며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과 ICT 융합 환경에서 현재 미디어 영역별·매체별·기능별로 파편화돼 있는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과 중복 규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음 보실까요? 36쪽입니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무를 방송·통신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조직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나중에 민주당의 내부 토론을 거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법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같은 시청각미디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원회 조직에서 포괄하는 안이다. 위원회 명칭 변경 외에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사무가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 통합하되 방송 분야만 통합할 것인지 OTT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미디어 분야까지 포괄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결국 OTT와 디지털 콘텐츠는 여러 부처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미디어 융합, 거버넌스 통합이 기대에 못 미치

는 상태로 법안이 서둘러 제출돼서 지금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달리 정부 여당 내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됐던 안은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맡는 독임제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정말 진흥을 위한 부처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디어의 공공성 같은 관련 규제를 맡는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제가 과방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배척되었습니다. 배척되고 지금 앞에 있는 시청각미디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있는 방통위에다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으면서 일부 나갔던 방송 관련 사무만 가져와서 그걸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는 그뿐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맡는 독임제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 이렇게 해야지 진흥이 빨리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음에 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해 공공미디어위원회. 2개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도 지금 안이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진흥 업무를 통합 포괄하는 독임제 부처와 미디어의 공적 책무와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진흥과 규제를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이 상당히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서 한번 숙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 분야 및 신문·인터넷 신문 등—신문과 인터넷 신문 같은—언론 미디어 분야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독임제 부처에서 맡도록 하고', 즉 미디어콘텐츠부라는 부를 따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 책무, 시청자 보호, 이용자 분쟁 조정 같은 업무는 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에 좋은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과방위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가 특히 이른바 지배구조, 방송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송지배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진하는 선진 국회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방송법 토론회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걱정은 있지요. 왜냐하면 방송은 갑자기 허위·조작 뉴스가 돼서는 안 될 테고 방송은 또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이고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걸 하면 좋은데 우리의 방송지배구조의 문제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공적인 담론, 공정성, 이른바 페어니스(fairness)입니다. 페어니스 그리고 또 정확성(accuracy) 이런 것들이 주안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송사 이사를 누가 뽑느냐, 방송사 종사자가 뽑느냐 아니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과 함께 주권의 위임을 통해서 적임자를 뽑느냐 뭐 이런 것이 주요 논쟁인데 최근의 방송법은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은 정치적 후견주의다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냥 방송 종사자가 방송사 임원과 방송사 사장과 경영을 좌우하겠다. 말하자면 그것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한테, 즉 자기들한테, 특정한 사람들한테 그냥 넘겨주는 것이다, 이것이 저의 반대의견이었고 그 걱정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방송이 과연 공정해질 것이냐, 방송이 과연 정확할 것이냐, 방송이 페어니스라는 독트린을 지킬 수 있

을 것이냐, 방송이 애큐러시라는 그 미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글로벌한 균형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걱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 책무, 시청자 보호와 이용자 분쟁 조정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벌써 방송법 돼 가지고 방송법에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에 가장 강한 영향을 갖고 있는 민노총 방송노조가 지금 다수를 좌우하고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어떤 위임구조는 매우 퇴색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개정 방송법의 문제점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안에서도,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조금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정부 여당,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둘째 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첫 번째 안으로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느냐 하면 사실상 이 2개의 모델은 글로벌의 모델에서 따로따로 2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하는 것인데요. 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는 것, 37쪽 보시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이 메모랜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 정책 관련 주요 정부 부처는 1개의 위원회—이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그리고 2개의 독임제 부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다음에 문체부가 되겠지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부처 간 분산된 사무를 통합하는 것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영화산업을 보여 주면서 영화산업진흥기금,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모태펀드를 볼 때 문체부에서 350억, 과기부에서 450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집중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서 부처 간 분산된 사무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독임제 부처가 미디어 산업 영역 대부분을 통합 관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 관련 사무를 통합하되 위원회 조직의 사무를 확대하여 진흥과 규제 업무를 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독임제 부처의, 장관 부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4명의 방송통신위원, 즉 5명의 위원으로 된 합의제 부처입니다. 이건 독임제 부처와 다른 것이지요. 독임제 부처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게 독임제 부처입니다.

즉, 그래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독임제 부처의 의사결정 신속성과 효율성만큼 위원회 조직의 다수 위원의 전문성과 협의를 통한 신중한 심의와 의결도 중요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독임제 부처가 공공미디어를 제외한 미디어 거버넌스를 전담하는 안은 시의적·효율적 정책 집행과 미래지향적 대응이 가능하고 위원회 조직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사무를 담당하는 안은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정책 수립과 독립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독임제 부처를 통해서 미디어의 진흥, OTT를 비롯해서 방송·통신 전체, 영화 산업까지 진흥은 독임제 부처가, 지금은 막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한목에 모으고, 공공미디어 부분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원회로 하자는 이런 안이 제 생각하고도 비슷하고 우리 당에서도 다수 이 안은 상당히 존중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여당 내에서 법안이 나왔는데 이 법안은 일체 무시되고 지금 갑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거의 방통위와 다를 바 없는데 부칙 조항 하나가 아주 특이한 이런 구조로 지금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짧게 정리된 이 쟁점을 보시고자 한다면 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 자료를 꼭 읽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물론 협의체 조직에서도 진흥이 필요한 분야의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게 지금 딱 우리 방통위가 겪고 있는 그 사태 아니겠습니까?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저는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도 숫자만 키웠고 3명의 상근과 4명의 비상근을 해서,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무슨 차별이 있을 것인지,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것도 있지만 역시 여기도 대통령과 국회 여야의 몫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방통위 2인 체제에 있었던 그 문제점을 똑같이 되풀이할 정치적 위험성이 큽니다. 그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이 리포트에서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정책 집행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도 역시 정치적인 어떤 분열로 해서 공전될 확률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확대될 경우나 위원회 추천 및 구성 지연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 수를 늘려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인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나 이 7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처럼 상근과 비상근은 권한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상근과 비상근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근 5인 체제를 한 것은 미국 FCC 체제랑 똑같습니다. 그것 다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명의 상근 전문위원이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그 정치적인 분열 때문에 구성도 못 되고 지금 이런 걸 겪고 있는데 그걸 7명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그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국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의제 조직인 위원회 수가 너무 적으면 소수의 폐쇄적인 의견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위원 수가 많으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을 두어 규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7인 구조가 나온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겪고 있던 그런 사태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를 제대로 한번 가동시켜서, 복원시켜서 해 보는 전통을 가지고서 방송미디어통신이라는 거대한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파편화시켜 놓고 한 사람만 바꾸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39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또 법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심도 깊은 범부처, 국회 상임위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방미통위인가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이것만으로는 통합과 융합 거버넌스의 목적을 정말 전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현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법률과 통합·재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디어 플랫폼별 수직적 규제 체계는 새로운 미디어 융합과 산업 환경에 적합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수직적이거나 분절돼 있습니다. 층위별 체계(전송-콘텐츠 또는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에 따라 동일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논의가 이 방미특위법에 있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부처 소속 또는 관계 기관의 기능과 업무 등의 재편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별·분야별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나뉘어 소속되거나 관계된 기관의 사무와 기능에 대해서도 전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과방위에서만 속도전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쪽 보시겠습니다.

예전의 미디어 환경에 비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제의 공백과 중복 등의 문제를 안고도 오래 유지해 왔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로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기하지 않되, 실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정책 수립 집행과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 같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미디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미디어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적 소재, 한국의 콘텐츠,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으면서 한국의 미디어산업을 키우지 못하고 외국에 거대한 수확을 안겨주는 이런 사실을 빨리 역전시킬 수 있는 미디어 융합 거버넌스, 미디어 통합 지원 체제와 아주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 리포트 말고요 실제로는 우리 미디어 방송, 새 정부의 방송학회, 미디어학회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 미디어학회의 의견은 방송학회, 언론학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4대 학회인가 5대 학회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운영되었던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보고되고 우리 과방위의 민주당 위원들한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유홍식 교수께서 미디어방송통신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했던 방송학회, 관련 학회 발표문입니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대안의 비교, 검토 및 평가, 유홍식’.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입니다. 2025년 7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

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거의 막바지에 이런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검토할 당시에 나왔던 전문기관의 보고서입니다.

42쪽 보시지요.

지금 우리 미디어방송통신은 거대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검토되어야 되고 그 방향도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내 미디어 시장은 2023년 방송사업 매출의 실질적 감소 시작으로 2024년에 감소세가 증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앱을 보고 글로벌 앱을 이용하는 시간의 점유율이 91.6%가 됐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67%. 인스타그램 14.7%, 틱톡 6.2%, 넷플릭스 3.3%, 국내 OTT인 티빙 0.8%입니다.

우리 방송통신미디어의 위기라는 것을 지표로 보여 주겠습니다. 이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소개된 글입니다.

지상파방송 2023년 방송사업 매출은 3조 7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는 4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조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지상파방송 2024년 방송사업 매출은 3조 50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전년 대비 5.4%p 떨어졌습니다.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홈쇼핑방송 PP, 일반 PP 모두 2023년·2024년 방송사업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IPTV와 CP만이 유일하게 방송사업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케데헌으로 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해서 이걸 안 본 세계 사람이 없고 이걸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 한국 사람이 큰 긍지를 갖게 되어서 우리 미디어방송통신, 우리 콘텐츠가 잘되고 있구나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이 지표들이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국내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 현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상파들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MBC 좋은 방송이라고 MBC를 많이 본다 그러지만 MBC가 그렇게 좋은 방송이면 왜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하겠습니까? 광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OTT라는 새로운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C는 광고 매출 감소로 인한 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MBC의 큰 대형 드라마 또 대형 연예, 대형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 이제 안 만듭니다, 적자를 이길 방법이 없어서.

영업 적자는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MBC 사옥이 있었던 곳에 지금 여의도의 최고 핫 플레이스가 된, 여의도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브라이튼이라는 곳에서 임대소득 얻고 상암동의 사옥에서 여러 임대소득 얻고,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같은 데 댓글 보면 가혹한 임대인이겠다 싶은 이런 인상이 드는 임차인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경상수지를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입이 안 느니까 더 큰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는 과거 같은 '대장금'이며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생각하는데 그것 큰 오산입니다. SO들도 그렇고요 위성도 그렇고, IPTV는 최근에 많이들 보시니까 좀 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도 보는 방식, 보는 미디어의 형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아까 중앙대 교수님 그 논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유튜브·숏폼·OTT 앱, OTT 앱이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 이런 것이지요. 이렇게들 막 바뀌고 있습니다.

OTT, 미디어 세계 최강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45페이지 보실까요?

주요 OTT 앱의 사용시간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가 압도적입니다. 티빙이 16.5%, 왓챠가…… 웨이브가 9% 이렇습니다. 또 쿠팡플레이가 10.2% 있네요. 월간 사용자 수, 넷플릭스가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가 2016년에 국내에 처음, 한국 시장에 상륙한 지가 9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강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2019년, 2016년 이런 시기에는 우리 MBC나 KBS나 또 CJ ENM이나 이런 미디어 회사들이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획력과 투자 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집중하지 못했고 넷플릭스는 거대한 시장과 또 새로운 형식으로 차고 들어서 이제는 우리 한국 콘텐츠를 모두 자기 것으로 팔고 있고 우리는 넷플릭스에 종속되었습니다.

46쪽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우리가 넷플릭스를 또 국정감사 때도 부릅니다. 부르면 넷플릭스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콘텐츠로 돈을 벌지만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시민들이고 또 한국에서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투자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국 배우들 사 가고 한국 배우들 쓰고 한국 제작 환경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토종 OTT라든가 우리 국내 영화사 같은 데서 영화 만드는 비용이 덩달아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콘텐츠 제작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오징어 게임’요 1000억 원 썼습니다. ‘경성크리처’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잠깐 봤는데 이것 700억 썼습니다. ‘도적: 칼의 소리’ 360억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사나 우리나라 회사에서 이런 것 쓸 수 있습니까? 이제 돈을 못 버는데. 그런데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렇게 미디어 세계가 상전벽해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방송·통신 또 미디어·영화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나눠서 쓴다고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반목하고 규제는 또 3겹 4겹으로 묶어서, 그러니 어떻게 미디어 환경 개선, 미디어방송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K-팝, K-무비, K-드라마, K-컬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케데헌, 케데헌 환호와 눈물, 우리가 케데헌 보고서 우리 산업이 이렇게 큰 혜택을 보겠구나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물론 부수효과가 큽니다. 케데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지금 미국의 슈퍼마켓 H마트 그런 데 가면 그냥 한국 김밥 같은 것……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에 갔던 대통령의 부인도, 어디 갔나요? 어디 가니까 김밥 먹는 것, 통으로 김밥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외국 사람들이 김밥 보면 시커먼 종이 같은 데다가 밥을 싸 먹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아주 핫한 메뉴가 됐습니다.

그런 부수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이 케데헌을 통해서 한국 콘텐츠, 한국 모티브, 한국 스토리, 한국의 음악, 한국의 리듬 또 한국계, 한국사람들이 만든 모든 가치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다 수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케데헌 하면서, 우리가 또 국뽕이라는 게 있어서 자랑하다 보니까 현실을 좀 안 보고 그랬던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우리 미디어·방송·통신 새로운 거버넌스, 진흥과 규제의 새로운 환경, 더 큰 진흥과 더 정확한 규제의 환경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가 정말 필요한데 그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파편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 계속 제 이야기고요.

지금 케데헌 같은 것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와 해결하지 않고 결국 정부나 국회가 또 산업계가 케데헌이 탄생했던 것처럼 어떤 자본과 진흥 환경과 또 적절한 규제와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고 그냥 어느 드라마가 미국 OTT에 의존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했다 하는 것에만 일시적으로 환호하는 그런 일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성과는 글로벌 OTT와 일부 국내 스타 감독·작가에만 기속되고 한국 드라마산업은 글로벌 OTT 하청기지로 전락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내 지상파방송 그리고 CJ ENM이라든가 또 국내 롯데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메이저 제작사들, 영화사들,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글로벌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못해서 그러면 쇠퇴한 것입니까? 저는 기업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적절한 마중물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지상파방송, 메이저 제작사·영화사가 히트시켰던,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작품들 볼까요?

겨울연가(2003년), 이것 일본 사람들이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욘사마, 이렇게 전부 했던 그것이 겨울연가였고.

대장금, 대장금은 심지어 이란에서까지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대장금이 너무 좋아서…… 제가 특파원 할 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까지 지냈던, 한때 아시아 차르라고 불릴 만큼 아시아·태평양 쪽에서 영향력이 컸던 커트 캠벨 박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장금 같은 것 이란에서 성공한 것 보니까 우리 미국과 이란이 새롭게 관계를 틀 때는 한국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문화 파워였습니다. 지금 대장금은 여전히 동남아에서도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올드보이(2003년), 별에서 온 그대(2014년), 태양의 후예(2016년), 킹덤, 기생충 이런 것들이 전부 세계적 작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콘텐츠 명가로 인정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서 시작해서 영화, 케이팝 같은 미디어, 지금 이제 다시 K-뷰티, K-푸드, K-코스메틱, K-투어 등으로 이게 국가이미지와 브랜드파워 향상에 일등공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K-콘텐츠 수출액이 132억 4000만 달러였고요. 이것은 가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전기차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방송사업 매출은 2023년부터 위기적

감소를 불러왔고 국내 OTT 사업자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미디어통신의 새로운 융합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지금 급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학회와 또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화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케데헌 정도가, 케데헌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고 산업이 큰 흥행에 성공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케데헌 모멘텀을 제대로 이어 가기 위해서 지금 분절되어 있는, 여러 부처와 여러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 미디어·방송·통신의 거버넌스 체제를 통합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미디어학회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통합과 분리의 장단점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크게 취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야겠지요.

49쪽 보실까요.

우리가 방송 지배구조를 가지고 국회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지배구조를 가지고 우리 당이 여당일 때는 재의결권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제의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야당이고 소수당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루씩 끊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과방위에서 계속 싸워 왔던 이른바 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이제 좀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지배구조의 문제는 누가 방송사 이사를 임명하느냐, 누가 선출하느냐, 누가 선임하느냐 그런 문제의 논란에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때까지 우리 여야 의원들, 선배·동료 의원들 또 정권 교체를 하면서 또 다수당 소수당이 뒤바뀌면서도 방송법 구조가 딱 그렇게 됐던 것은 그것이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외국에서는 방송 지배구조가 이렇게 문제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어니스, 방송이 공평하게 여러 입장을 다루고 있느냐. 또 애큐러시, 그 방송이 세상의 변화나 진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느냐. 만일 방송이 유튜브 1인 제작자처럼 그냥 카더라, 그런 의심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지상파의 태도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공영미디어위원회나 공공미디어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이제 좀 나아가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지금 과기정통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또 콘진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여러 진흥 기구들은 통합하자.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 당장 시장 다녀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다 전통시장 상인들 또 그나마 도심에 시내에 상권이 밀접돼 있다는 지역 가도 손님이 없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적 없다라는 하소연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반전 때, 초저녁 때 처음에 할 때 나중에도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영화 관객수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습니다. 영화 관객수가 2019년 코로나 직전에 3억 5000만 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영화 보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 끝난 뒤에 2024년에는 1억 명으로 줄었습니다, 1년에 1억 명.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5000만 명

이니까 1년에 두 번밖에 영화를 안 본다는 거지요. 옛날에 3억 5000만 명일 때는 한 여섯 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안산이며 도봉이며 우리 마산이며 대개 도심에 멀티플렉스가 있습니다.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에 오는 사람 수가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3분의 1 토막이 나면 상권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지금 지방의 소도시라든가 구도심이라든가 또는 수도권의 작은 도시들, 수도권 도시들에 뭐 큰 구경거리가 있습니까? 서울처럼 세종문화회관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영화관이라는 게 큰 즐거움인데 영화 보러 와서 거기서 밥 사 먹고 작은 옷도 한 가지 사고 책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이래야 주변 상권이 되는데 그것이 지난 5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 났으니 상권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거 굉장히 큰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쿠폰 주면 직접 효과가 잠깐잠깐 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지,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여기에 정말 우리가 문화를 키워서 영화산업이 종전의 3억 5000만 명 수준으로 다시 회복만 해 줘도 우리 동네가 확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산업 진흥하는 이런 펀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간 450억, 문체부에 35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무슨 매칭하는 구조인데. 그게 똑같이 영화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기금인데 가뜩이나 적은 기금 규모로 그게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걸 좀 융합해서 통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미디어산업, 방송과 영화와 콘텐츠를 진흥하는 그런 부처가 효율적으로 글로벌의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아까 한 이야기에 대해서 세계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영화관들 다 그렇지, 세계적으로 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전부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절반 또 전체 영화 관객 수는 20년 만에 1억 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케데헌 모멘텀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방송 통신 영화 이런 것들, 정부가 여러 부처에서 찔끔찔끔 지원하고 진흥하고 서로가 각각 밥그릇처럼 챙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K-컬처의 진흥을 위해서 거대한 하나의 진흥 거버넌스, 프로모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의 이야기들은, 쭉 제가 했던 발표 자료들은…… 50쪽 보실까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대통령선거가 임박했을 때 제안한 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쭉 보여 드린 그 발제문은 미디어 3학회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회원들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기반으로 마련한 발제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의 미디어방송통신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가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51쪽 보시겠습니다.

이 발표문의 신뢰성에 대해서 혹시 의심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이런 저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 논문에 실린 그대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쪽 보시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건 정말 이렇게 급속하게 한 몇십 명의 인원 증원 정도만 있는 이런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 학회의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의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의 공익성과 공적 가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I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전통적 미디어가 OTT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대체되고 있고 또한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따라서 C-P-N-D의 모든 과정과 영역에서 전통적 미디어의 해체와 재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재편이 절실하고 불가피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미디어 시장의 경기가 소멸되고 있는데 지금 부처별로, 위원회별로 찔끔찔끔 이렇게 진흥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기존 전통적 미디어 중심의 규제 체계가 가지는 실효성도 매우 약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OTT 같은 신규 디지털 미디어의 보편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공익성, 공적 책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디어산업과 시장의 확장과 탈국경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체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정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54쪽 보시지요.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대담한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가 절실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략도 좀 통이 커야 됩니다. AX·DX 시대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도 필요하다고 방송·미디어 학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K-컬처의 원조이자 교두보인 미디어콘텐츠산업을 반도체, AI 등과 함께 진정한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TT 시대 이전에 이미 대박을 친 한국 K-콘텐츠가 있습니다. 겨울연가, 대장금, 올드보이,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킹덤, 기생충 또 BTS·블랙핑크·EXO 같은 이런 굉장한 케이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영화, 케이팝 같은 미디어 콘텐츠는 K-뷰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K-콘텐츠 수출액을 한번 환산해 보니까 가전과 전기차보다 더 많다라는 것 아까 발표해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비극은 정작 '겨울연가'를 만들고 '대장금'을 만든,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를 만든 국내 방송사업 매출액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국내 OTT 사업자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략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없이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송·미디어·언론 학회에서는 국가전략산업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첨단로봇, 과학기술 분야에만 집중하지 말고 미디어 콘텐츠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자, 이것 옳은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고, 이렇게 하려면 이것을 관장하는…… 그러면 이것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면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찔끔, 방통위에서 찔끔, 문체부에서 찔끔 또 어느 부처에서 찔끔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크게 통합해서 거버넌스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공세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55쪽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디어·방송 학회의 발표문입니다.

2023년에 한류 실태조사를 25개국의 2만 5000명에 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012년에는 드라마가 1등입니다. 드라마, 케이팝, 한식, 전자제품 그리고 한국전쟁, 이게 한국 하면 생각나는 인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서는 한국 하면 케이팝 또 한식, 한류 스타, 드라마, IT 제품 이렇게 떠올려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케이팝의 영향이 큰 것이고 결국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이지요, 케데헌도 이런 케이팝의 큰 바람 속에서 가능했던 글로벌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한류시장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한류시장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다 수확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또 하나는 이거랑은 좀 다른 분야입니다만 결국 같이 연계된 K-푸드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자리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 가 보면 옛날 노포들, 오래된 식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옛날에 아주 맛으로 승부하던 오래된 요리사들 또 음식점 주인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만두고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지금 K-푸드도 새롭게 하려면 그 노포에서부터 우리 새로운 K-셰프들도 보급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밥도 통으로 먹는 게 케데몬 때문에 유행이 됐는데 정작 외국에 나가 보면……

이전에 제가 국회에서, OECD에 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OECD Parliamentary Network'라는 게 있는데 그 회의 때, 갑자기 국회의장께서 가라 그래 가지고 21대 때 한 며칠 파리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파리 가면 한식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식집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대충 파악하기로도 한식집이 80~100곳 되는데—파리에요—그 주인 한국 사람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식의 수준이라는 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인즉슨 한류시장의 규모를 반영하면 이걸 제대로 수확하고 더 키워 나가려면 지금 케이팝과 K-무비, K-드라마로 키워진 이런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더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케이팝과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디어방송통신 융합체계가 그냥 방송·통신 융합 정도의 한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서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낡았다, 규제는 너무 복잡하다 이런 한계를 띠었기 때문에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는 더 큰 틀에서 더 공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표결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멈춰 주시고 더 큰 틀에서 논의하자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57쪽 보시지요.

이게 숫자가 커 보입니다마는, 괄호 안이 2022년 통계입니다. 괄호 밖은 2023년이지요. 1년 사이에 전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류의 원조라고 할 만한, 한때 케이팝, K-드라마의 원조였던 MBC나 KBS라든가 SBS나 또 종편에서는 JTBC나 이런 쪽들은 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저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열광

을 받는 사이에 정작 그 원조들, 그 싹을 틔우고 만들고 전 세계로 유행을 시켰던 방송사업자들은 저렇게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뭔가 방송통신미디어의 진흥체계가 잘못됐기 때문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 방송사들이 갑자기 그 여력이 줄어들었을 리는 없을 테고.

방송사들이 이제 정치적 논란, 방송 지배구조 논란 그리고 방송보도를 둘러싼 정치적 극심한 대립, 이 속에서 시청자들이 방송을 안 본다고 그럽니다. 방송을 안 보면 당연히 시청률이 떨어지겠지요. 한때 MBC, KBS 시청률 20%, 30% 넘었습니다. 지금 어느 방송사든 지상파방송사가 두 자릿수를 넘지 않습니다. 한 자릿수인데 그것도 때때로 롱 어 싱글 디짓(long a single digit)입니다. 결국 5% 미만이라는 이야기지요. 잘해야 6~7%입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방송이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서 절반의 사람들은 그 방송을 안 봅니다. 방송사가 줄어드니까 그 드라마나 그 예능프로그램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걸 안 보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안 보면 광고주가 안 붙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서 또는 방송법을 둘러싸고서 벌인 그 숱한 논란이 결국 방송사업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미디어방송통신의 새로운 시스템은 이제는 정치적 편향성,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는 좀 더 선진적인 거버넌스, 결국 공정성과 정확성, 페어니스와 애큐러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누가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적 문제는 글로벌 표준에 따르도록 맡기는 것이 제일 맞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한때 국민의 방송 또 국민의 이웃으로 생각했던 그런 친근감…… '아, 저 방송은 나랑 안 맞아. 저 방송은 못 보겠어, 안 보겠어'라는 이런 적대적 진영으로 나뉘어서 방송 시청률이 반 토막, 3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방송사의 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그런 육성책도 따로따로 다 통합해서 마련해야겠지요. 외국에 좋은 선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8쪽 보겠습니다.

참혹합니다. 지금 국내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 현황 보십시오. 지상파가 점점 이렇게 쇠잔해지면 큰 K-한류를 대변하던 콘텐츠를 못 만듭니다. 더 이상 대장금 이런 걸 못 만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 점점 케데헌 같은 그런 큰 글로벌 대작은 없어지고 자꾸 글로벌 OTT의 종속 사업자 그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을 좀 최소화해서 우리나라의 K-콘텐츠가, 광복 80주년에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각광받는 시기에?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방송사업자라든가 또는 콘텐츠 창작자·제작자 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미디어·방송 콘텐츠 거버넌스 체제를 빨리 확보해야겠다. 더 이상 한정된 예산을 이 부처 저 부처 저 위원회가 쪼개서 나눠 가지고 규제는 3겹 4겹으로 묶여 있는 이런 미디어 거버넌스 체제, 방송 거버넌스, 통신 거버넌스를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59쪽 보십시오.

지상파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방송법하고 방문진법 또 이런 법들이 모두 다

방송사 지배구조를 둘러싼 방송사 이사를 누가 임명하냐, 방송사의 종사자한테 돌려주자 이렇게 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상파의 연전 대비 영업손익 보십시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을 잡아 줘야 방송사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방송사들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이런 문제에서 케이팝, K-웨이브, K-드라마를 일으켰던 주역들이 원래 원조인데 그 원조가 힘을 찾기 위해서는 영업적자를 줄여 줘야 되는, 영업손익이 줄게 할 수 있는 무슨 진흥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지금 MBC는 자기들 영업이익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신히 메우고 있는데 MBC 정말 옛날 같은 과감한 미디어 제국으로 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KBS는 시청료 받아 가지고, 시청료 통합 징수한다고 KBS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법안도 냈는데 정말 KBS의 경우에는 KBS의 자산을 활용해서 K-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한 해에 거두어들이는 수신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수신료 거두면 수신료 징수 비용을 또 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왜 수신료를 내냐고, 그 돈 2500원씩인데 그것도 안 내려고 그럽니다. 징수하기도 힘듭니다. 2500원 받으려고 징수비용이 몇백 원씩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진흥하려면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제가 그것 발의를 했는데…… KBS가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국회 앞에만 보더라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쓰던 옛날 아파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KBS 자산처럼 되어 있지만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합니다. 처분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경우는 KBS의 부동산 자산…… 그리고 KBS의 부동산 자산이 옛날에 방송사, 지방방송사 사옥 또는 지방의 안테나 때문에 전국의 주요 도시에 다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마산만 하더라도 가포의 제일 좋은 환경에 있는 곳에 송신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옛날의 KBS 방송사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BS도 경남으로 통합하면서 창원을 메인으로 하고 진주는 그냥 간간이 쓰는 곳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도 방송사 사용 말고도 부동산 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K-미디어, 과거의 우리 K-콘텐츠, K-드라마와 케이팝의 신화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금으로 예컨대 한 1조 정도를 조달해라, 그것을 팔아서라도 혹은 펀드를 조성해서.

여의도 KBS2 사옥이 있습니다. 저쪽 동여의도에 있지요, 옛날 TBC 자리. 그 경우도 지금 묶여 있습니다만…… 서여의도는 층고 10층 이하로 제한돼 있어서 고층을 못 짓지만 동여의도의 KBS2 그걸 하면 엄청난 부동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KBS가 그 재산을 1억씩 넘는 연봉을 더 높여 주는 그런 데 사용할 게 아니라 딱 항목을 따로 해서 이것은 넷플릭스에 대항할 만한 엄청난 미디어를 만들어라. 케데헌 만드는 데 1200억 들었다거든요. 1000억짜리 하나 만들어 봐라 이렇게 가야지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방송·통신, 방송법 개정도 해야 되고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거대한 미디어 거버넌스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국 BBC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서 스튜디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님하고 의원님들께도 KBS의 수신료 문제, 저희들은 그것만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오히려 공연히 시청자 거부 운동 같은 것으로 잘못 발화되면 KBS가 더 큰 손실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도 절박해서 지난번에 우리 당도 수신료 통합하는 것을 찬성해 주었습니다, 의견에 따라서 자유투표로 해서 해 줬는데. 그것만으로 돼서는 안 된다.

지금 MBC는 공영방송이기는 하지만 민영 주식회사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예산을, 물론 MBC에 방문진 자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라는 엄청난 국가 재산을 사용하게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MBC는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잘하면 광고 수익을 얻어서 스스로 더 큰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MBC의 실력이라면 무슨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방송의 기조를 주제로 해서 다시 옛날 같은 한국산, 정말 K-원산지 콘텐츠로 한번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미통위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흥은 독임제, 그러니까 장관 부처로 가고 또 공정성과 정확성의 공공미디어 운영위원회는 합의제로 가고 하는 이런 것도 지난번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사이에 있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발판으로, 그런 게 더 맞는 방향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논의를 또 계속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딱 목표 정해 놓고 한 사람 제척할 사유로 그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제정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정말 초점에서 한참 벗어나고 긴급성도 의심받고 또 나중에는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케데헌 모멘텀을 만들자, 크게 만들자.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KBS의…… 제가 21대 국회 때 ‘OECD Parliamentary Network’ 회의를 다녀오면서 잠깐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했는데 그때 블랙핑크 공연한다고 프랑크푸르트 축구장이 꽉 찬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KBS인가 SBS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KBS나, 특히 KBS는 수신료에만 의존해야 되는 방송이니까 KBS1에는 KBS의 자산을 활용해서 일정액 부분 정도를 일종의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를 KBS가 K-콘텐츠 강화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만 한정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방송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의 대담한 과감한 진흥 프로모션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의 지방 사옥이라든가 지방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건 지금 사실은 침체에 빠진 지방도시들의 새로운 도심 재구축의 계기도 될 것입니다. 지금 지방도시에 가 보면 지방도시는 극장도 쇠퇴하고 문 닫고 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나 돈이 되는 기업들이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의 투자가 필요한데 공공투자 여력도 없는 마당이기 때문에 만일 KBS가 지역마다 그 핵심 부동산의 경우에, 도심에 있는 제일 요지의 부동산을 활용해서 그 재원은 그 수익은 K-콘텐츠의 진흥에 쓰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KBS 지방 사옥이라든가 KBS 부동산의 개발이 우리 지역 소도시의, 지역도시의 새로운 부흥에도 큰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대담하게 기획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고 관리하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60쪽 보실까요.

60쪽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지상파의 위기, 특히 지금 매체별 광고매출 증감 현황 보십시오. 지상파가 2014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광고매출이 거의 2조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23년에 보십시오. 1조도 안 됩니다. 특히 22년, 23년에 그 증감액이 3000억가량 됐습니다.

22년, 2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경제가 조금 나빠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17년 18년 19년 20년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반도체가 초특수를 누렸습니다, 초격차를 누렸고. 그래서 매년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세수가 100조씩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22년, 23년에는 좀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약간의 하강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4분의 3 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광고매출이. 제일 큰 데가 KBS예요. KBS2겠지요. MBC가 26.5%, SBS도 21.6%, 지역 MBC 23.3%, 지역 민방 22.8% 이렇게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지금 우리 방송법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배 구조에 천착했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과……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적인 이런 난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국가적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만들어야 될 방송사, 그게 BBC의 모토입니다. BBC의 모토처럼 해야 될 방송사의 사명은 온데간데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위임하도록 한 그런 위임 구조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이름으로 배척하고 갑자기 방송종사자가 누구의 위임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국회에서 만든 개정법안의 도움으로 지금, 더더욱 세계적 방송사들의 큰 미덕이자 가치 목표인 공정성과 정확성에 이 방송법이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의 불신, 적어도 같은 진영이 아닌 국민들의 불신에 직면할 것이고 그것은 그나마 있던 시청률을 또 반 토막 낼 것이고 방송사업 매출도,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광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광고매출 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케이팝의 왕국, 케이팝의 제국, 케이팝의 큰 산실이었던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다시 한번 이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 갈 계기는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우울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금 방송미디어학회의 논문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것이지요. 이게 10년 전하고 불과 몇 년 전 사이만 하더라도 우리 방송사들이, 우리 K-콘텐츠 프로그램 창작자들이, 제작자들이 이런 엄청난 작품을, 글로벌 히트를 만들었습니다.

‘킹덤’, ‘킹덤’은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에 같이 풀기도 했지요.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역시 넷플릭스가 같이 했던 것이고요. ‘대장금’은 우리 지상파 방송이 크게 성공시킨 것이지요. ‘겨울연가’도 그렇고 ‘사랑의 불시착’도 그렇고 ‘시크릿 가든’도 그렇고 ‘태양의 후예’…… 지금 이런 것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문화로 우리 방송사들이, 지상파들이 또 창작자들, 제작자들이 했던 이

런 거대한 문화적 자산을 우리는 수확하지 못하고 글로벌 콘텐츠가 수확하고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어서 간신히 명맥을 잇는 존재가 되어 가는가.

그래서 이 방송·미디어 3학회가 지난 5월 달에 토론회를 갖고서 만들었던 발표문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62쪽 보시지요.

마지막 골든타임,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내수 미디어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OTT에 의해 촉발된 위기 강화로 인한 붕괴, 국가전략산업화와 규제 개혁에 의한 미디어콘텐츠 강국의 위상 강화와 공고화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붕괴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전략산업화와 규제 개혁을 위한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의 대대적 개편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되고 내일 의결할지 모르는 이 법안이 그런 법안입니까? 전혀 그런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이 방송·미디어 학회 전문가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편화된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고착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갈등 구조화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체계는 미디어 산업·기업의 국내·글로벌 경쟁력과 혁신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중한 위기 상황에서 거버넌스와 규제 체계의 개편에 만일 실기할 경우에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시장은 글로벌 OTT 기업에 잠식·종속되어 글로벌 OTT 기업의 값싼 하청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내 미디어의 공적가치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새로운 정부 구성 시점이 최적의 시점이다. 그런데 내놓은 법안이 지금 이것입니다. 이 기대에 전혀 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그리고 합의를 통한 3개의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상정되고 이제 내일 저녁쯤에 표결에 부쳐질 방미통위 법안,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은 다음 세 가지 주제에 부응합니까?

첫 번째, 파편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통합 개편을 위한 법안입니까?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제도 개편을 위한 법안인가요? 낡은 미디어 규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법안입니까? 아마 이 법안을 들여다보셨다면 3개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법안은 추진됩니까?

6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학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3개 부처, 2개의 독임제 부처와 1개의 합의제 위원회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거대하게 융합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은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일부 것만 떼어서 하나 마나 한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서 누릴 효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칙,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공직자를 승계한다. 단 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 부칙 바꾸려고 이렇게 서둘러야 됩니까? 그것은 위헌적입니다. 위헌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65쪽 보시겠습니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입니다.

매체별, 기능별로 두세 개 부처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수립·추진·집행의 비효율성 구조화, 중복 규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책·규제 비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보도·종편 PP, 유료방송 플랫폼, PP(홈쇼핑 포함), OTT가 매체별로 관할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공적 규제와 경쟁 규제 같은 규제 유형별로도 부처별 관할권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됩니다. 학회가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3 대 2 위원 구조, 정치권 갈등의 이식과 첨예화.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가, 정부 여당이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체제를 제대로 한번 복원해 보자. 그렇게 복원하지 않은 채 7인으로 바꾼다고 그게 잘 돌아갈까요, 더구나 절박한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의 시대적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어려운 것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국회가 추천하기로 한 3인을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한 2명의 몫 중에서, 2명의 방송통신위원 중에서 현재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추천 몫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인 체제 복원합니다.

저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사람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여야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그래서 국회가 3명 몫이지만 지금 우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인권위원회 표결에서 보았듯이 여당에서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의를 해 봅시다. 3인을 합의해서 우리 다 같이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분 한 분 더 있고 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처럼 1인 체제, 2인 체제 그런 파행은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방송심의위원회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착취 디지털물로 인한 피해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조카들, 어린 딸들이 성착취물 디지털 영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디지털에서 내리든지 규제해서 없애야 되는데 방심위가 업무 중단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부터 빨리 복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고 다수를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모범적으로 한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방송통신학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방통위원회의 이런 정치 갈등의 방식이 또 되풀이된다면 그것이 3인 상근, 4인 비상근으로 한다고 한들 그 되풀이가 끊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9월26일 24시 경과)

그렇게 되면 국내 미디어시장 내 정책과 규제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정책·규제 개편의 대응성은 떨어지고 중복 규제를 넘어서 규제의 증폭, 진흥의 지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도와줄 텐데 뭘 한다고 칭칭 감고 있으니까 미

디어나 방송·통신은 뭘 할 수도 없습니다.

진흥한다고 말은 하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나눠 주니까 진흥 효과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케데헌의 쇼크, 케데헌 서프라이즈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각성하게 된 만큼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 나가야겠지요. 그렇게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정부 내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이미 다양하고 좋은 법안이 있는데 왜 그 법안은 굳이 배척하고 단 하나의 외통수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66쪽 보겠습니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 그래서 빠른 해결이 필요한데요. 정책 및 규제 기능의 파편화와 비효율성…… 이것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방송·미디어학회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서 지금이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리한 미디어·방송·언론학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미디어 정책과 규제 기능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컨트롤타워 역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영화산업 보니까 영화진흥펀드 만드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0억, 문체부 350억 그리고 민간 얼마 이래 가지고 합니다. 지금 케데헌 하나에 1200억, 1500억씩 투자하는데 우리 정부 두 개 합쳐 봐도 8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나누어서 쪼개 쓰니…… 미디어 정책들이 이처럼 개별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니까 정책 효율성과 정책 효과가 있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미디어시장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는데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수립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요.

기술의 서비스화, 혁신적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라는 것은 케데헌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케데헌 디스페어라 그럴까요? ‘아이고, 케데헌은 저렇게 잘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절망감만 안겨 주는 거버넌스 체제입니다, 지금은.

기술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관할권 경쟁만 치열합니다. 이 관료주의 그리고 이 칸막이 현상이야 근대 관료국가의 다 같은 공통적 속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닐 테고.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육군부하고 해군부가 싸우니까 전쟁도 좀 그렇게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전 세계가 그러한데, 그래서 거버넌스가 중요한 겁니다. 부처를 쪼개 놓으면 부처끼리 효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권한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기금 만들어 놓은 것 800억도 안 되는데 그걸 두 개 부처로 나누어 놓으니 영화산업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회에서도 다급한 마음으로…… OTT도 부처별로 관할권 경쟁을 하니 국가전략 차원에서 통합적인 육성·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방미통위 법안에 이 OTT는 뺐습니다,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법안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체위 또 이게 통상 문제와 관계될 수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부 이런 쪽이랑 같이 상의해서 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이걸 할 때, 방송·통신을 융합할 때 범정부기구를 만들었습니

다. 그리고 나중에 이명박 정부 넘어와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할 때 국회에서도 한 상임위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거대한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고 훨씬 더 거대한 엄청난 충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위기인데. 우리나라 토종 OTT는 말라 죽게 생겼는데 우리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 지금 우리 방미통위법에 대해서 절규하듯이 따져 묻고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진흥정책이 분산됨에 따라 미디어 분야의 총체적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넷플릭스가 우편으로 DVD 배달하던 회사에서 저렇게 세계의 제국으로 키워 나갈 때 우리는 우리 기업들, CJ ENM·MBC·KBS·SBS·JTBC 또는 티빙 이런 회사들 발목만 잡았던 거 아니냐 이런 거 반성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규제와 산업정책 기관의 분리로 인해서 공공정책의 가치와 산업정책의 가치가 더 조화되지 못하고 상충적 결과가 번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정책 목표에 대한 조화가 부족하니 담당 부처 간 정책 목표 충돌만 발생했지요. 예컨대 OTT도 그랬고 플랫폼 정책도 그렇고 AI 정책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 개편하는 목적도 아마 이런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 있을 텐데 저희들 이견이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잘못 보고 있고 너무 협의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아닌가, 너무 선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지금 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보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필요하고요. 정말 공격적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점 하나 더 찍어 가지고 뭐 만든다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호도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래서 멈춰 주셔야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해서 체제 개편할 때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정부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또 공약도 있었지만 철회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철회하면 우리는 더 큰 논의를 함께 벌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너무 놓쳐도 안 되니까 시기를 서로 정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고 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미디어학회, 방송학회, 언론학회의 간절한 염원 또 우리 방송사들의 재원의 문제 또 그런 여러 환경의 문제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는 그런 K-콘텐츠를 만들 재원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정책의 가치도 있고 산업정책의 가치가 서로 병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진국의 사례에 따라서 그것이 독임 부처와 위원회의 어떤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일방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67쪽 보겠습니다.

미디어 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야 됩니다. 미디어 시장 경계의 소멸과 확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긴 것이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미통위가 생긴다는데 여기서 미디어는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과기부 방송 관련 몇 개 더 붙여 놓고 그게 방미통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디어에 대한, OTT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 개편, 큰 컨버전스와 큰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쟁력 높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판매를 통한 이익 실현 그리고 국제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들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국내 미디어 플랫폼의 구매 능력이 부족해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판매 의존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를 풀어 주는 국가 전략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AI와 함께 성장하고 있고 현재의 한류를 근본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미디어·콘텐츠·문화 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런 미디어·콘텐츠·문화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정되고 내일 표결을 앞둔 방미통위 법안은 전혀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멈추시고 함께 정말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여야 또 진보, 그런 여러 학회 그리고 지금 창작자·제작자들 또 유통하는 OTT와의 이야기를 들어서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68쪽 보겠습니다.

이게 미디어학회, 방송통신학회가 만든 그래픽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아마 KBS PD 출신이지요, 우리 방송사 PD 출신이 만든 겁니다, '오징어 게임'.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안 사니까 넷플릭스에 판 거예요. 그리고 한국 배우들, 이정재 다 갔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서 1조 원 이상 수익을 얻었고요.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OTT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가입자를 폭증시켰거든요. 이번에 다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통해서 또 성장시켰습니다.

반면에 국내에 들인 수익은 얼마입니까? 제작비 250억 원, 여기 제작 스튜디오 쓰고 여기서 밥 먹고 한 그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정재라는 배우를 탄생시켰지요.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감독도 아마 지상파 방송 PD 출신이 세계적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2'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퀄리티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조 원 이상 수익은,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종속화되거나 주변화됐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만든 콘텐츠, 우리가 만든 배우가 남의 장사에 큰 벌이만 해 주고 정작 우리는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미디어 정책, 69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서 방송통신학회, 지난 5월 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절실히 원하면서 만든 언론학회, 방송학회, 미디어학회의 3자 토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69쪽 보시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기존 논의를 보시겠습니다. 2008년에 방통위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정책 규제 기능이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구조는 미국 FCC랑 비슷해서 아마 그 당시로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바라보는 불가피한 개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그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작되면서 방통위의 일부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됩니다. 이번의 방미통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그냥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일부 갔던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요. 같은 부서를 몇 개를 다시 돌려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 이게 탄핵 전 대통령선거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원화 또는 삼원화된 비효율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편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사장되고 지금 방미통위 법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겨레신문 1면 기사도 보여 드리고 했듯이 진보적 언론단체, 시민단체들도 왜 이렇게 서두르나, 제대로 된 내용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거기다가 또 왜 방심위의 수장은 정무직으로 해 가지고 방심위를 정부가 규제하려고 그러느냐라는 반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부칙 4조인가요, 부칙에서 나오는 딱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공직자, 공무원들은 다 승계한다. 단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정무직.

그런데 이것은 모순적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철회했습니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는 법안에서는 새로운 금융위원회 통합기구는, 금융 개편 기구는 금융위원회 전원, 정무직을 포함해서 전부 다 승계한다 돼 있습니다. 왜 같은 합의제 기구인데 어떤 정부 위원회에서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고 어떤 정부에서는 어떤 위원회에서는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분적 입법이라 그러고 위헌이라 그러는 겁니다. 국보위 입법과 닮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란을 부르지 말고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정말 방송학회, 통신학회, 미디어학회가 간절히 호소하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70쪽 보시겠습니다.

한국방송학회의 방송정책특별위원회 2021년 이 구조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당 내에서 이 법안을 낸 의원님이 계십니다. 똑같이 상정됐는데 이 법안은 그냥 무시됐습니다. 심지어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낸 여당 의원이 '왜 같이 통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그냥 방미통위만 하느냐'라고 실제로 속기록을 보면 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도 무시하고 밀어붙입니까?

한국방송학회 방송정책특별위원회의 이 안은 아마도 지금 보니까 방송학회, 언론학회, 방송미디어학회가 공통으로 다 채택하고 공유하고 있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방송통신 업무를 통합하자. 그래서 가칭 미디어정보통신부를 신설하

자. 이 법안이 실제로 민주당 의원이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만 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케데헌 쇼크, 케데헌 서프라이즈에서 봤듯이 케데헌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 가기 위한 진흥기구를 독임제 부처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문제, 공영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또 정확성 또 우리 대한민국 글로벌 국가를 세계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마치 BBC 같은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방송, 그걸 다룰 수 있는 공영 미디어로 전환하자. 방통위는 이제 규제하고 진흥하고 이런 복잡한 것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걱정하고 항상 논란을 불러온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정확성, 방송의 품격만 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만 만들자. 저는 이 안을 찬성합니다.

71쪽 보시겠습니다.

방송학회가 논문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양당의 논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논의할 수 있는 그 기본 틀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싹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것은…… 71페이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의 방미통위법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 2022년 대통령선거 때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공약은 이번에 제출된 법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국민의힘의 정부조직과도 흡사합니다. 두 당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공약수도 있고 또 공배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면 정말 미디어·방송·통신학회와 미디어·방송의 창작자들, 제작자들 또 배급자들이 바라는, 그런 산업에서 바라는 정말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미디어·통신·방송 거버넌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것을 하지 않고 이 공약에도 없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밀어붙이냐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결단을 잘하셔 가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 체제 그 문제를 정말 금융계의 걱정을 수렴해서 철회했듯이 이 법안도 내일 멈춰 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급하면 같이 논의해서 연말까지 만들자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큰 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듭시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무려 3개 부처, 장관급 부처 3개가, 2개의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 부처, 3개가 최소한 합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국회는 여러 상임위를 겹치는, 문체위·과방위·정무위 또 OTT 문제 같은 경우는 통상마찰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자위나 외통위까지 해서 이런 진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서 케데헌 모멘텀을 살려 나가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에……

다 돼 갑니다. 이것만 들으십시오. 학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이렇게 발표자료가 깁니다.

72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 원칙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정치 갈등의 이식 구조가 아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 기존 미디어와의 균형 발전, 신규 미디어 서비스

의 역기능 최소화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 통합적 미디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고 그런 통합 거버넌스 기반으로 협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고 통합적 정책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건 좋은 말인데, 이렇게 다 같이 여야가 합의하고 또 미디어정책학회에서도 보수 진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학회나 시민단체들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 방향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난 5월 달이지요. 대통령선거 직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언론학회, 방송학회, 미디어·방송학회가 정부에 제안했던 최종안은 이렇습니다.

73쪽 보실까요?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이건 진흥을 위한 부처지요. 장관급으로 만들자. 하나로 만들자—그리고 공영미디어위원회, 그렇게 되면 방통위에 찔끔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부 있고 또 문체부에 일부 있는 것들을……

정말 이제 미디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학회 발표 분석 자료에 보면 나오듯이 지금 한류 미디어의 수출액이 전기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출보다도 수출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내 통상환경 속에서, 나는 이것은 한미 통상마찰 이후에 우리 통상환경의 변화를 새롭게 감안해서 국가가 하나의 돌파구로 만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넷플릭스 OTT로 해서 미국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런데 넷플릭스 OTT가 파는 것들은 다 우리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적은 정부 재정, 미국에 비하면 적은 정부 재정을 그나마도 쪼개서 이리저리 나누고, 규제는 삼겹 사겹으로 칡뿌리 감듯이 칭칭 감아서 발목 붙잡고 머리채 끄집어 당기고 목줄 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통상마찰 때문에 자동차 수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잘하고 국제적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이제 김밥을 그냥 한입에 먹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로 우리 문화콘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미디어·ICT를 진흥할 수 있는 통합 부처를 만들고,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또 과방위에서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했던 그 지긋지긋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이제 떨쳐 버리고 공정성·객관성·중립성이라고 하는 그런 공영미디어성만 가지는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역시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인 만큼 대통령실이 관련 수석실에서 그걸 또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회의 의견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제가 그냥 2008년의 방통위 체제로 돌아가는 것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미디어라고 하는 거대한 환경 변화, 특히 미디어 중에 OTT라고 하는 거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도 또 거버넌스에 대한 시급한 개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심도 깊게 논의되고 또 여당 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 법안이 모조리 사장되고 그냥 갑자기 부칙을 통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교체할 수 있는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에 집착하시느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의 구조는 저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미디어·방송학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디어·ICT 진흥을 위한 독임제 부처,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로 조각조각 나 있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문체부 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씩 자기 권리처럼 쥐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케데헌 하나 만드는데 미국 넷플릭스는 1200억 정도 썼다는데 우리는 영화산업진흥기금 같은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0억, 문체부 350억, 그 800억 가지고 부처가 쪼개 가지고 있고 또 이곳저곳 저렇게 저렇게 부처 관심대로 나눠 쓰면 어떻게 그걸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말 미디어, OTT와 또 우리 이런 영화 산업들,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있고 우리 한국의 청년들, 젊은 창작자들, 제작자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진흥할 수 있는, 힘을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속도 있게 전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부처를 만들자.

그렇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는 방송·통신이라는 광범위한 걸 떠나서 정말 공정성과 중립성, 정확성 또 우리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마치 BBC의 목표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그걸 관리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만들자. 그리고 부처끼리 이견 같은 게 있을 때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역시 대통령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적절하게 이 문제를 추진하라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과 산업 영역을 구분해서 산업 영역에는 통합 독임제 부처로, 즉 미디어방송통신 진흥 위주로 가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통합 독임제 부처는 정보미디어부나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영방송 업무를 제외한 방통위 업무, 과기정통부의 네트워크정책실 업무와 전파정책국, 문체부 일부 부서를 통합하여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부가 큰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 내에서도 이게 지금 상임위가 서로 막……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이것은 과방위 소관입니다. 영상콘텐츠산업과, 방송영상광고과 이것은 문체위 소관입니다. 또 방통위는 과방위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상임위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우리 국회에서도 특위가 되어서, 정부조직 개편 때문에 우리 상임위 일부 개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좀 뒤에 따져 봐야겠지요. 따져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방송미디어통신특위가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단 한 사람만…… 방통위를 없애고 또 방통위를 2008년 방통위식으로 복원시키면서 사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법안이라고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는 단 한 사람만 이 새로운 조직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문을 닫아 잠그는 위헌적인 처분적 입법이니까 이건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74쪽 보실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는 이 학회들의 기

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공영미디어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구조로 해서 통합위원장만 새로 뽑고 또 국회가 지금 당장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을 몇 개월 뒤에 뽑겠다는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무슨 정무직으로 보해 가지고 정부가 방송·통신 심의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75쪽 보실까요?

방송·미디어학회에서 이럴 경우에 각 부처에서 어떤 부서가, 어떤 부가 이리저리 재편되는지를 이미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논의만 시작되면 이런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76쪽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무엇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논의는 OTT 같은 게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에는 그냥 아주 파편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단 하나의 목적만 갖고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뻔히 예상되는 처분적 입법으로 왜 이렇게 나가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원화된 새로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도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임제로 하느냐 또는 위원회로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위원회 구조로 하는 게…… 또 미국은 위원회 구조로 합니다. 그런데 독임제 구조로 하는 나라가 또 있고 해서, 그건 아까 국회입법조사처의 논점과 이슈 자료가 아주 짧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78쪽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OTT 플랫폼 확산에 따라서 미디어 시장,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자꾸 정치적 도구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지만, 과거 정부만 방송 장악했고 지금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면 벌일수록 그런 의구심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방송이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정확하면 어느 정당이 그 방송사 사장에 대해서 집착하겠습니까? 그 이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국에서도 물론 그런 심증이야 있겠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확립된 가치……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늘 과방위 논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저널리즘에 대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어니스 독트린(fairness doctrine) 같은 것, 공정성 원칙,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니티(equal time equal opportunity).

그런데 우리 방송사에서도 보도준칙 보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지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그냥 여섯 꼭지, 다섯 꼭지 내리 그냥 한 후보와 특정 정당에 대한 뚜렷한 선입견이 돼 있는 보도를 잇달아 합니까? 그러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정권이 바뀌어서 선제적으로 뭘 할까 봐 지레 겁먹고 이래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데 이거 지배구조 바꾼다고 해서 정리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나는 저널리즘 원칙으로의 회귀, 이게 과연 페어한지…… 보도의 준칙을 분명히 지키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 무려 열여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우리 언론인들이 본다면은 그렇게 무리하게 방송을 안 하겠지요.

제가 지금 어느 시기에 어느 정부를 편드는 방송은 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이 어느 정당과 어느 진영, 집권당의 또는 집권 정부의 자발적 수족이 되려는 순간 그건 이미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그런 방송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79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규제 체계도 또, 그러니까 거버넌스에는 정부 부처의 편제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법들, 여러 가지 중첩된 법체계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상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방송법의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구분 모호성과 혼재성이 존재되므로 이걸 이제 조화와 균형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 구분은 미디어 규제 체계 개혁의 기초이자 기반이라고 학회는 공통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도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콘텐츠 시청 행태의 변화로 기존 방송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미디어가 여론 다양성, 경쟁 상황을 해칠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도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중심으로의 미디어생태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같은 공적 책무를 강조하는 규제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도 강력한 소유·진입 규제와 규제 실효성이 낮은 행위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상품 구성과 수익 증대를 위한 전략 수립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송의 수익을 자꾸 떨어트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의 재편과 또 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봤던 그런 신선한 충격과 기대 같은 것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살려 나가려고 한다면 이런 지금 막 삼중 사중으로 얽혀 있는 정부 부처 거버넌스뿐 아니라 규제 체제, 법령 체제도 신속하게 거버넌스와 함께 조정해야겠습니다.

80쪽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최형두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과방위에서 물론 이 논의를 많이 해 온 편입니다만 그러나 방송학회, 방송·미디어학회, 언론학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법을 지금 이대로 서두를 게 아니라 이런 큰 골자 속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되고 정부도 여러 부처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국회도 과방위, 문체위 또 정무위 또 관련된 상임위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우리 미디어를 새롭게 진흥시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케데헌을 통해서 다시 확인한 미디어 콘텐츠 여러 스토리와 또 우리 케이팝의

리듬과 심지어 K-푸드까지, 우리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는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함께 만들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80쪽 보시면 지금 학회에서 전문가들은, 학자들은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분이, 그런 규제 체계 설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영방송사는 지상파를 이용할 경우에 막대한 지상파 이용료를 내고 있고 그러면 기업 논리에 따라서 투자와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분명하게 그건 미디어로서 지켜야 될 윤리와 기준, 가짜뉴스를 퍼트려서는 안 될 테고 또 풍속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민영방송사들이 언론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지금 현행의 방송미디어 규제 체제는 민영방송사들의 발목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영방송사들이 스스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에는 공적 책무 수행에 필요한 공적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KBS 수신료를 갑자기 올려 줄 수도 없습니다. 여당도, 민주당도 2500원을 통합 징수하도록 해 주자고 했지 그걸 5000원으로 올려 주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방송환경 변화 때문에 지금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KBS 시청률이라는 것은 그걸 보는 전제하에 준조세처럼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 통합 수신료를 하자고 했던 여당조차도 그것을 5000원이나 1만 원쯤으로 올려 주자. 예컨대 B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NHK도 그렇고. 우리는 2500원입니다. 몇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KBS가 클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 칠백몇십조 하면서 또 적자에서 국가 부채를 일으키는데 KBS 도와주려고 부채를 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방송법을 바꾸어서 KBS의 고유자산을 이런 콘텐츠 투자에 쓸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재부 재산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못 쓰는데 바로 앞에 있는 여의도 우리 국회 의사당 건너편에 있는 연구동, 그것 옛날에 국회 의원회관이었습니다. 연구동 같은 것을 개발해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비싸게 사서 빌려 쓸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 새로운 제작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은 그냥 KBS 직원들의 복지가 아니라 KBS가 정말 K-미디어의 적자로서 우리 K-콘텐츠를 진흥시키는 그런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1조 정도 펀드를 조성하면, 케데헌이 1200억으로 만들었다니까 그것을 몰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작 환경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KBS는 다시 글로벌에 크게 이름을 떨칠 만한 대작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팔 수 있고 또 수익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KBS 미디어 전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방식으로 공적 재원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갖고 있는 KBS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키워 줘야 됩니다. 지금 그냥 기재부 재산처럼 꼼짝 못 하도록 해 갖고는, 시청료도 안 올려 주고, 그러면 무엇으로 KBS가 사회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K-콘텐츠 허브 역할을 못 하겠지요.

그런데 이 구조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BBC라든가 NHK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BBC가 그런 고유재산을 스튜디오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KBS의 시청료 수입만큼 큰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왜 우리는 꽁꽁 묶어 둡니까? 민영방송은 발목을 묶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공영방송은 공적 재원을 제대로 조달도 안 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 K-콘텐츠라든가 우리 미디어의 진흥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의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에 적합한 차별화된 규제체계도 시급합니다. 이게 미디어·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면서 더 적확해지게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실현이라든가 다양성과 지역성, 사회문화적 가치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영역에서는 혁신성, 자율성, 효율성, 경쟁 촉진 같은 산업경제적 가치를 목표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81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는 미래 지향적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 영역의 경우에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그러니까 CPN이네요—계층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서 공정경쟁, 효율성,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업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이 OTT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전제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이를 통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정책 목적을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 사업자 규모, 서비스 영향력에 서비스 분류하는 분류 체계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차등화된 규제체계를 개선해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제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82쪽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 체제는 시장 영역의 경우에는 자율규제와 최소규제의 원칙으로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하고 사전규제와 행위규제의 최소화, 과도한 진입규제와 소유구조와 같은 구조적 규제를 폐지해야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약간 주제와 관련돼서 이야기하자면 예컨대 지금 YTN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YTN이 공영방송인가.

YTN은 뉴스채널 방송인데, 연합뉴스가 1996년인가요 95년에 미국의 CNN을 본받아서 뉴스채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까지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 IMF 때 심각한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또 YTN이라는 것이 한국의 CNN이라는 그 기치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 당시에 KDN, 한국마사회 같은 공기업들이,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재정구조가 좋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최대 주주로 해서 YTN 지분을 인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지배구조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영향력이 있을 테고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서 YTN 사장이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친소관계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YTN은 공기업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YTN은 굉장히

어려웠던 IMF 시기에 한시적으로 정부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YTN은 나중에 코스닥에 등록도 되었고 주식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YTN의 미래 가치를 알아본 그런 기업들이—미래에셋 같은 곳입니다—주식을 조금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의 경우에는 지금 그럴 경우에, 저는 YTN 논란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CNN이 공기업 소유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미국 CNN은 그냥 미국의 한 사기업이 뉴스채널의 상업적 가치를 보고서 그 고유의 신뢰성 또 정확성 이런 것을 무기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거기는. 물론 공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율규제와 최소규제의 원칙으로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YTN 청문회도 했습니다, 우리 과방위에서. 그런데 YTN 청문회의 핵심은 YTN을 왜 어느 회사에 넘겨줬느냐, 공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서 YTN이 민영회사가 됐다는 것이 오히려 그게 큰 문제인 듯이 자꾸 논란이 되고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 만일 따지려고 했으면 YTN은 KDN 등에서 매각을 할 때 과연 제값을 받았느냐, 과연 제대로 된 컨소시엄이 인수했느냐 그런 걸 따졌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논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가 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느 기업이든 언론사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건 또 우리 언론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신문사들은 지역의 건설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언론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는, 저는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방송사조차도, 지금 거대한 기업들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마당에 아예 공기업의 지분 매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공기업이 한국의 CNN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더구나 그 공기업인 KDN 같은 경우는 지금 100조 원의 적자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데 KDN이 정말 YTN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한국전력 부채를 갚는 데 일부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YTN은 글로벌 미디어로서 부상해서, 지금 아마 동북아에서도 24시간 동안 뉴스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YTN은 AI로 바로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글로벌 미디어로 크기 위해서 바로 AI로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야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YTN 청문회 해서 왜 공기업 지분을 팔았냐고 혼내고 그 판 공기업들 그 과정을 문제 삼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물론 그 공기업을 매각할 때 사기업한테 특정하게 혜택을 줬느냐, 그 공기업이 볼 때. 그러면 그 공기업이 손해배상을 제기했겠지요. 시장가치가 주당 8000원인데 이걸 누가 5000원에 팔라고 강요했다 그러면 벌써 강요한 사람 감옥 갔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것하고 그냥 공기업의 지분을 해서 공공성을 해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지난번 방송법 필리버스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새로운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뉴욕타임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뉴욕타임스 언론인이 한 얼마쯤 될까요? 대개는 한 10명 되려나요. 50명이 넘습니다. 50명이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미디어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이신문은 전부 망해 가고 있습니다. 망해 가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종이신문 회사가, 우리 물론 뉴욕타임스가 중앙데일리에서 찍어서 배달되곤 합니다만 종이로 얻는 수익은 아주 일부입니다. 영어로 다 되고 심지어는 요즘은 챗GPT로 딱 뉴욕타임스 보면 한글로 바로 번역도 됩니다.

그러면 뭘로 승부를 거느냐? 콘텐츠, 뉴스. 세상을 보여 주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뉴스, 정확한 뉴스.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도 맨날 욕하면서 실제로는 뉴욕타임스 읽어 본다는 것 아닙니까? 뉴욕타임스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실과 정확성, 세상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심층취재 이런 콘텐츠의 힘이 오히려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데를 글로벌 미디어로 만들고 아시아 본부에만 50명이 근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가 몇 년 전에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옮겼다는 건 참 우리나라로 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원래 뉴욕타임스 아시아 본부가 홍콩에 있었는데 홍콩에서 보안법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시위도 격렬하고 표현의 자유가 자꾸 희박해지니까 또 뉴욕타임스 언론인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디로 옮길 건지 뉴욕타임스 아시아 지국, 홍콩 지국에 근무하는 사람들보고 정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도쿄도 훨씬 더 매력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도쿄도 있을 테고 또 싱가포르도 있을 테고 또 국제화된 타일랜드의 어딥니까 그런 데도 있을 텐데 놀랍게도 뉴욕타임스의 아시아 지국은 서울로 오기로 홍콩 지국에서 근무하던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들이 결정을 했답니다. 왜? 우리 한국 정부가 뉴욕타임스 서울로 오라고 건물을 빌려준 것도 없고 인센티브를 제출한 것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도 그런 결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놀라워서 뉴욕타임스 서울의 최상훈 특파원, AP에 있었고 퓰리처상을 받았던 한국 출신의 최상훈 특파원을 불러서 뉴욕타임스 서울 지국 시대를 한번 들어 봤더니 놀랍게도 주한미국대사관에 외교관도 왔습니다, 미국 외교관이. 자기들도 처음 들었답니다, 50명씩 있는 것 처음 알았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아침에 회의하면서 내가 많은 우리 보좌진들 국회의원님들 참석하시라고 달았던 제목이 이렇습니다, '뉴욕에 밤이 오면 뉴욕타임스 편집국은 서울로 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스리 시프트(three shift), 3교대로 움직입니다. 뉴욕의 아침 시간은, 나인 투 파이브를 한다면 나인 투 파이브는 뉴욕 편집국이 전 세계 뉴욕타임스 뉴스를 데스크 보고 디지털로 송출하고 인쇄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뉴욕에 밤이 오면 나인 투 파이브가 되어서 5시 이후가 되면 한국 시간은 그때는 아침 시간이 됩니다. 그때부터 심지어 뉴욕 시내, 뉴욕의 밤중에 심야에 일어난 사건사고 기사도 뉴욕타임스 서울사무소, 아시아 본부에서 데스크를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디지털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구독자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뉴욕타임스는 계속 흑자를 냅니다. 흑자를 내니까 이 사람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뉴스 편집과 뉴스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 돈을 버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YTN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TN도 왜 한국 뉴스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시간 이점으로 해서 동북아 시간 타임에서는 YTN이 CNN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콘텐츠 매력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CNN이 이제는 미국의 CNN 못지않은 매력을 그리고 BBC보다 더 큰 매력을 품을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율규제와 최소규제의 원칙으로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하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진입 규제, 옛날에 공기업이 IMF 위기 때 좀 도와줬다고 공기업 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간섭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도한 진입 규제를 풀고 소유 구조와 같은 구조의 규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체제, 이용자 권익 증진을 찾는 목표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요. 미디어와 AI 융합 환경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공영미디어위원회의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84쪽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사회적 논의 기구. 미디어를 우리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방송통신을 우리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 기구, 미디어 콘텐츠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관·산·학·연이 참가하는 이런 사회적 논의 기구고요.

1999년에 방송개혁위원회, 2024년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와 같은 그런 큰 국내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협의체가 시급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범부처를 총괄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송 개혁을 하면서, 85쪽 보시면 여러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신이 덧붙여졌고 이제는 이 당시의 영역에 없던 새로운 숏폼이라든가 새로운 미디어, 소셜미디어라든가 또는 OTT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더 큰 새로운 어떤 논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게 실제로 작년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86쪽 보십시오.

이게 2024년에도, 작년이네요. 작년에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민간 지혜를 모아서……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했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도 수렴해서 지금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에 함께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논의가 있고 진전되어 와서 축적되어 왔습니다. 지난 정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미디어 3학회……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이 있었고 이것이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아마 일부 반영이 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깜빡이도 안 켜고 급진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마찰로 앞으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또는 반도체도 그렇고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엇이겠

습니까, 그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 같은 이런 문화 콘텐츠 영역입니다. 여기에 전략적인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대국으로 우뚝 섰는데 이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 부가가치가 높고 더 신나고 더 창의적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수출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품을 수출하는 시대는 조금씩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서비스의 수출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상품의 교역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미국의 이런 디커플링, 전략적 충돌 이전에도 이미 WTO 통계를 보면 상품 교역량은 서서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서비스 교역, 서비스 교역이 뭡니까? 바로 금융이고 이런 디지털 무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무역을 잘하려면 디지털·미디어·방송·통신 우리의 콘텐츠 능력,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전략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 지금 갈갈이 찢겨서 그나마 작은 재정을 이곳저곳 파편적으로 쓰니까 아무런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혁파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진흥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규제도 예측 가능하게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어느 기업이 한국의 CNN을 만들겠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뉴스의 매력과 정확성, 신속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쓸데없는 규제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 정부의……

88쪽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논의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는 아마 다양한 논의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3학회 안도 있고 또 방송콘텐츠특위 안도 있고 또 민언련 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독임제 부처에 대한 거부감, 독임제 부처를 다루는 갈등까지도 제가 엿보았는데 그런 것들도 우선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런 큰 틀의 미디어 거버넌스를 함께 논의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보면 특정한 흐름만 이 법안에 반영돼서 급격하게 그동안 논의의 모든 성과를 그냥 다 묵살하고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9쪽 보실까요?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결과보고’ 보면 여기에 여러 학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 논의가 필요하고 심도 깊은 숙의가 필요한데 이런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해야 됩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서프라이즈, 케데헌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대한민국 콘텐츠의 위력과 가능성,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국내 창작자와 국내 제작자 또 국내 OTT의 수확으로 이어지지 않고 글로벌 OTT의 수확으로 이어진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의에서 저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논의가 그런 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절되고 파편화된 정부, 2개의 독임제 정부 부처와 하나의 위원회, 그래서 결국 3개의 장관급 기구가 서로 조금조금씩 방송미디어통신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과 예산을 나눠 갖고 있는 구조가 얼마나 우리 성장에 제약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죽 말

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회사,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사실 이렇게 클 때까지…… 넷플릭스 회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인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비디오를 대여해 주던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대여 업체, 대여 업체보다 못한 회사였는데 그 넷플릭스가 DVD를 우편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급기야 유튜브 시대의 시작과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OTT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고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콘텐츠 파워를 만나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그런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2016년, 2019년 그 당시만……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MBC, KBS, SBS, JTBC 그다음에 CJ ENM 또 롯데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 충분히 한국의 엄청난 콘텐츠 파워, 스토리 파워 또는 케이팝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거의 뒤로 쇠퇴하는 사이에 넷플릭스가 한국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지난 방송미디어통신학회의 오랜 논의 그리고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내용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기획위원회와 또 여권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는커녕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에 말하자면 점 몇 개만 더 찍어서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구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은 다 이어받으면서 단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장만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려는 그게 과연 그렇게 시급하게 이 법을 서두를 이유가 되는지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헌적인 처분적 입법이라고 합니다. 매우 위헌적인데, 이런 위헌적인 것을 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때 그 결정문을 통해서 이 역시도 매우 부당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미특위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벌써 2년째 공백 상태인 그리고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벌써 몇 개월째 공백 상태인데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또 대통령이 얼마든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임명을 해서 이런 공백을 메꾸고 지난 정부 시절, 지난 시절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이번부터는 잘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합의제기구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공백 상태, 공석 상태를 장기 방치하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심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어린 딸들 그리고 조카들, 젊은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인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피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런 심각성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도박, 마약 같은 불법·유해정보 차단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지어 도박과 마약 이런 것들이 젊은 층에까지 침투되어 나가는 이런 현실을 제가 개탄스럽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위를 통해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서, 잘못된 짓을 해서 죄를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부작위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민생에 큰 폐를 끼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법이라는 이런 그동안의 논의와도 전혀 맞지 않고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 갈 사정도 아니고 방송통신미디어학회가 간절히 바라는 방향도 아니고 오로지 한 사람만 제척하기 위한 위헌적 처분 입법을 하지 말고, 또 오랫동안 방통위와 방심위를 공백 상태로 둠으로써 지금 성범죄 착취물이 디지털 공간에 번연히 돌아다녀서 그 피해를 계속 입게 만들고 있는 이런 심각한 민생 침해 사례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도 방통위, 방송심의위원회,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서 그 공백을 임명을 통해서 만들기를 제가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재판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아니, 국회가 왜 3인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서 의결하지 않는가. 그래 놓고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했다고 탄핵하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인가'라고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는 그렇다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도 일하지 말고 젊은 여성들이 입고 있는 그 성착취 디지털물로 인한 피해가 방치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두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까지 도박과 마약에 빠져들고 있는, 그 도박·마약 유해 정보 사이트를 차단하고 심사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물었던 질문을, 지금 저희들은 방미통위법이라고 하는 국민의 여망과 미디어방송통신학회의 여망과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한 사람을 겨냥한 처분적 입법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사태에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물었던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던 진보적 시민단체들 또는 학회들이 왜 방미통위 같은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속도에 매몰돼서 내실을 놓치냐고 지적했던 기자회견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지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적으로 했던 것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제가 같이 그 뉴스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거기서 민간기구인 방심위를 행정기구화해서 정치적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진보단체, 시민사회단체 열한 곳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시민사회단체 또는 제 의견을 뛰어넘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리된 자료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를 했던 미디어 3학회의 특별정책 세미나 결과도 공유를 했습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공동의 정책 토론 내용, 정책 제안 내용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케데헌은 이번에 다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시청률과 시청자를 찍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가 2010년부터 전 세계를 석권한 성공한 글로벌 작품들이 많습니다. 왜 그 작품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OTT나 우리의 콘텐츠 제작자들, 방송사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큰돈을 벌고 더 크게 글로벌로 진출하지 못 했는가, 왜 점점 글로벌 콘텐츠의 종속 사업자로 전락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과 미디어방송통신, 성공한 대한민국의 미디어방송통신의 이런 큰 성과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산업을 키우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키우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방송통신 3학회가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산업을 키우고 어떻게 그동안 잘 만들어 왔던 이런 미디어방송통신의 좋은 콘텐츠를 더 빛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진흥책이 필요한가. 그런데 그렇게 진흥하지는 못하고 그 작은, 미국에 비하자면 훨씬 작은 정부 재정이고 마중물도 훨씬 작은데 그 마중물마저, 작은 마중물마저 부처별로 조금씩 조금씩 찢어서 나눠 주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영화산업진흥기금의 사례를 들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고, 우리 젊은 사람들과 우리의 수많은 창작자, 제작자들, 배급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지난 10여 년간 넷플릭스가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 국내의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했던 사람들이 퇴보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디어통신과 미디어방송통신의 새로운 진흥 시스템을 시급하게 규정해야 되고 그것은 어제 상정되어서 오늘 오후에, 저녁에 표결하려고 하는 이 방미통위법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방미통위 법안은 멈추어 달라.

정부가 엊그저께 금융위·금융감독원 체제 개편을 둘러싼 우리 금융계의 커다란 반발과 걱정, 우려를 담아서 멈췄듯이 지금 미디어학회와 또 미디어방송통신의 창작자, 제작자 이런 사람들의 그 열망을 담아서 또 여야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의 폭이 넓고 이미 그것을 확인해 준 만큼 함께 새롭게 논의하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미디어산업의 붕괴는 케데헌의 성과를 우리 국내가 수렴하지 못하고 글로벌 OTT가 다 수확하는 그 처참한 현실에서 잘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우수한 제작자, 우수한 창작자 그리고 우수한 스토리가 글로벌 OTT에 종속되어 가는, 우리는 부수적 수익을 얻는 그런 초라한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이고 미디어·방송·통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이것을 키워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반도체 그것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통상 환경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일깨움으로써 관세협상을 언젠가는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80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 광복 80주년에 확인한 것은 케데헌이라고 하는 우리의 콘텐츠, 우리의 소재,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리듬, 대한민국의 삶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문화적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AI뿐 아니라 문화·디지털 콘텐츠·방송의 위대한 저력을 살려서 우리 최고의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육성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야 되고 통합해야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법을 내서 그냥 일사천리로 의결해서 다수결로 밀어붙여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큰 절망감만 안겨 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국회가 무엇을 실패하고 있었나,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산업 21년 만에 1억 관객이 붕괴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그것이 비록 넷플릭스의 주문에 의해서 하더라도 한국의 제작자, 한국의 PD, 한국의 배우들이 만들어내서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친 그런 한국 K-무비, K-드라마의 신화가 새롭게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영화산업은 21년 만에 1억 관객이 붕괴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3억 5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저같이 지방 마산의 국회의원 또 수도권의 화성의 국회의원 또 동탄의 국회의원 또 도봉구나 은평구의 국회의원들도 잘 느끼시겠습니다만 대개 상권의 중심에는 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를 지나서 2000년대부터 2024년 사이에 관객 수가 3억 50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줄었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민 5000만 명이 1년에 최소한 대여섯 번씩 영화를 보러 가다가 지금은 두 번도 보러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개 그 상권을 보면, 왜 영화관이 상권에 있느냐? 대개 지방의 도시라든가 또는 수도권의 부심들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모일 만한 큰 문화적 매력이 따로 없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롯데 콘서트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한국 영화, 새로운 미국 영화…… 요즘은 연주도, 빈 필하모닉도 영화관에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를 찾아서 일상에서 피곤했던 것들을 씻어 내고 새로운 휴식을 찾아서 도심·부심으로 나와서 주로 영화관에서 봅니다.

왜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영화관에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화관에 과거에는 1년에 여섯 차례 오던 사람이 지금은 두 차례도 안 갈까 하는데, 손님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도심·부심의, 지방도시의 상권에서 장사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화산업을 키워야, 영화산업을 키워야,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방송통신의 콘텐츠를 키워야 젊은 사람에게 일자리도 제공되고 우리의 수출도 늘어나고 우리의 상권도 살아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마산에서 우리 창동·오동동 시민들이, 상권에서 상인들이 저한테 요청했던 가장 큰 것이 극장 좀 유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극장. 왜냐하면 200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마산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이 그 당시에 마지막 피크를 찍으면서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창동에는 시민극장, 강남극장 그리고 중앙극장, 개봉관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 이웃에 올라가면 태양극장 약간 멀긴 하지만 있고 또 3·15 회관도 있고 마산에만 영화관이 많았습니다, 구도심 근처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 그때 한때 자유무역지역에서만 3만 5000명 이상이 일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스턴 필하모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새로운 문화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도심에 있는 영화관으로 옵니다. 그러면 꽉 찹니다, 도시가. 영화관에 와서 떡볶이도 사 먹고 고려당에도 가고 학문

당에 가서 책도 사 보고 또 창동 골목의 작은 부티크 옷가게에 가서 예쁜 옷도 사고 또 통술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장사가 돌아가고 상권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산업 21년 만에 1억 관객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야 뭐 지난 5년간, 4년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OTT의 나라 아닙니까? 넷플릭스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넷플릭스도 보고 영화관에서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산업 진흥책,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뭔가 지원을 제대로 잘 못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지원을 제대로 했는데.

또 영화산업과 OTT 간의 새로운 균형과 양자에게 다 혜택을 주는 정책과 예산과 규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통계와 함께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상정하고 오늘 오후 늦게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좀 멈춰 주십시오. 다시 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과도 상의해 보십시오. 이 미디어·방송·통신의 새로운 융합 거버넌스를 더 큰 틀로 더 전략적으로 논의했는데 갑자기 그 논의는 실종되고 왜 이렇게 편협하고 좁은, 시급하지도 않은 이 법안을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아침 한 7시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짧게 짧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할 이야기도 많고 또 이왕 새벽 시간에 힘든데 여당 의원님들 수고도 덜어 드릴 겸 해서 7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필리버스터가 되면 오후 늦게 끝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어 갈 우리 당 이상휘 의원이 낮 시간에 좀 더 길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새벽에 넘기면 또 새벽에 끝나면 이상휘 의원이 새벽에 맡으셔 가지고 한 5시, 6시 반까지 이어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당에서는 두 번째로 이어받을 이상휘 의원이 조금 더 힘을 비축해서 오전 시간에 충분한 힘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7시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난번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때 세웠던 제 기록에는 못 미칩니다. 어제 박수민 의원이 필리버스터 역사상, 헌정 사상 17시간, 18시간 했나요? 그것 기록했습니다만 제 최고 기록은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시간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다녀오세요.

○최형두 의원 이제 심야 시간입니다. 심야 시간이어서 제가 나중에 한 5시쯤 돼서 다시 한 번 더 주제를 되풀이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혹시 밤늦게라도 지켜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제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아마 오래 지켜보신 우리 국민 여러분

께서도 아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지난 7월 이후에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쟁점이 되어 온 법안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삼권분립 이런 데 대한 서로의 이견과 걱정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제를 생각하는데 '법치와 자유'라는 이런 월간지를 제가 구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침 지금 내용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밤새워 필리버스터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가를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잠시 제가 토론 중에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8월 달에 방송법 개정안 반대토론 때 자주 인용했던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가 있었습니다. 주로 알고리즘의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유발 하라리가 지난 3월 달에 '넥서스' 출간을 하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만나기도 했었지요, 우리 사랑재에서.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넥서스' 출간 기자간담회입니다. '민주주의를 독재로 바꾸는 일에는 일종의 매뉴얼이 있다. 첫째, 자유언론을 파괴한다. 둘째, 사법의 독립을 파괴한다'.

오늘 저희가 토론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결국 특히 방송과 미디어를 관장하는 그런 정부기구기 때문에 그 정부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언론의 자유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걱정을 합니다. 지난번 방송법 개정 때도 그랬고 이것이 우리 언론의 환경을 크게 바꿀 것이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대로 자유로운 언론의 공기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에서도 검찰청법이라든가 또는 현재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한 지금 여권의 아주 심각한 비판, 비난, 위협 이런 것들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플라톤은 폭정은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민주주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정'이라는 책에서 경고했다고 합니다.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그 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2차대전 전에 이미 독일에서 입증이 되었지요. 나치 체제는 쿠데타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로 등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는 글은 '법치와 자유'라는 월간지에서 쓴 김영수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제가 왜 우리가 하루밖에 못 버틸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느냐라는 많은 분들의 의문에 대해서 답해 드린 것이 만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룻저녁에, 하룻나절에 지금 이렇게 절대다수 압도적인 정부 여당은 수십 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의결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여당 내에서도 좀 더 진지한 숙고와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시간도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오늘 저희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도 당초에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이 좀 달랐던 것 같고 또 여당 내에서도 전혀 다른 안으로 제시한 법안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그 법안이 다 무시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안이든 당의 지도부 또 당의 강경파들이 이거 갖고 한다고 결심만 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마든지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것은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막자는 겁니다.

지금 듣기로는 50여 개의 입법안이 국정개혁 법안으로 상정되고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많은 법안은 이미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되고 또 발효되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안은 경제적인 어떤 다른 부작용 같은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의석이 범여권이 180석에 가깝고 우리들은 107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 정치에서도 보면, 그러면 지금 180석은 전체 국회 의석의 60%를 넘는 만큼 절대다수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구별 득표를 보면 이 180석 가진 범여권과 우리 당의 의석득표율 격차는 5%p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실패한, 선거에 진 사람의 회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거는 선거고 1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건데. '대통령선거도 이전에 0.7%p 차이로 갈렸는데 뭘. 그때는 대통령 집권당이라 해 놓고. 지금은 5%p로 졌으면 진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45%나 되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만한 그런 의석이 없어서 국민들한테 너무 면목이 없고 또 송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석수에서 워낙 밀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범여권은 뭐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다 법안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씩이라도 연기를 시키면 적어도 수십 개를 한꺼번에는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여권 내에서도 조금 다시 숙의하게 되고 금융감독위원회법처럼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이 폭주가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의 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개혁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량의 제고, 케이퍼빌리티(capability)를 높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의의 제고, 저스티스(justice)의 제고, 이것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 중의 하나겠습니다. 역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 즉 콤피턴스(competence)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용량(capacity) 또 잠재력(potential), 정의는 사회적 올바름(rightness)을 실현하기 위한 평등(equality), 공평(fairness)으로 간략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국가의 개혁은 국가의 현실적 능력과 도덕적 올바름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요소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의의 제고를 위한 필수적 요소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며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한 변화는 개악이라고 합니다, 개악.

어떤 개혁이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고 그 반대로 몰락으로 이끄는가. 다론 아제모을루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A.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질문을 비교경제학적, 비교정치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포용적 경제제도냐 착취적 경제제도냐의 차이에 있는데 포용적 경제제도는 번영을, 착취적 경제제도는 몰락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포용적이라는 말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계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

나 교환과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포용적 경제제도란 또한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번영을 이끄는 이유는 개인이나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일하고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가 바로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착취적 제도란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나 공평무사한 법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일하거나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노력한 대가를 모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제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정치제도입니다. 정치제도는 권력분배 방식,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시민 참여의 정도를 규정합니다.

포용적 정치제도란 권력이 분산되고 시민들이 정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권력의 남용이 제한되며 결과적으로 경제제도 또한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권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착취적 정치제도는 부패와 독재를 초래하며 경제제도 역시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위한 구조로 설계됩니다. 즉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며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포용성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사례는 포용적 제도의 형성과 그로 인한 산업혁명의 발생 과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역사 사례입니다. 잉글랜드는 1688년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정치적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명예혁명은 의회가 절대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정치권력을 제약하며 왕의 전횡을 막고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권력은 소수의 왕과 귀족층에서 보다 넓은 계층으로 분산되었고 정치적 포용성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경제제도의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었고 공정한 법 집행이 보장되며 독점적인 특권을 부여하던 기존의 봉건적, 중상주의적 관행들이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특히 철도, 방직, 제철 등의 산업에서 나타난 기술혁신은 자유로운 시장과 안정된 권리 체제 속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국가의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엘리트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넓은 사회 구성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습니다. 이런 포용적 제도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경로 의존성에 기반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마그나 카르타 제정 이후에 점진적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업 계층, 지방 영주, 도시의 부르주아 계층 등이 점차 정치적 목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제도의 개혁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명예혁명은 이러한 장기적 변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으며 이후 산업혁명의 촉진제로 작용했습니다.

그 반대 사례가 라틴아메리카입니다. 16세기부터 시작한 스페인의 중남미 식민지 지배

는 정치적·경제적 구조 전반에 걸쳐 철저히 착취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식민지 해방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유지되면서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했습니다.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식민 통치는 본국의 왕과 소수 관료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를 거의 부여받지 못한 채 배제되었습니다. 경제적 제도 또한 철저히 엘리트 계층, 특히 식민 관료와 크리오요—현지 출신 유럽계 백인을 말한다고 합니다—크리오요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은 대규모 광산 채굴과 농장 노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노인들은 강제노동을 수행하는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엔코미엔다 그리고 미타 같은 노동 제도는 이러한 착취적 성격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장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토지와 자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자체를 스페인 정복지와 그 후손들에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는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자원의 수탈과 착취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식민지에서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적 기업활동이 억제되었고 포용적 경제질서가 형성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식민지 독립 이후에도 제도의 연속성은 지속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은 여전히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었으며 정치 권력 또한 그들에 의해 독점되었습니다. 독립은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배 엘리트는 구 식민지배 제도를 계승하거나 변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포용적 시장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지속적인 장애를 겪었습니다.

아프리카도 19세기 말 유럽 열강들의 아프리카 분할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식민지 시기 또한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를 주로 자원의 원천과 노동력의 공급처로 간주하였습니다. 식민지 정부는 토지, 노동 자원을 유럽 본국에 이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지 사회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제한되었고 교육과 제도적 발전은 의도적으로 억제되었습니다.

식민 통치는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통한 간접 통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 통치 구조는 소수집단이 다수 주민을 통제하고 수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전형적인 착취 제도였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엘리트 중심의 정치구조는 독립 이후 신생국가의 지배집단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권력은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부족, 계층, 군벌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벨기에 식민지 정부는 교육과 행정 경험을 현지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1960년 독립 당시 중앙정부를 운영할 인적자원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 정권은 불안정했고 수많은 쿠데타와 내전, 부패가 이어졌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로버트 무가베 정권이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고 토지개혁을 명목으로 경제 기반인 농업을 붕괴시켰습니다.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한 나이지리아는 오히려 자원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군부정권과 정치 엘리트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가자원이 소수집단에 집중되었고 수년간의, 수십 년의 내전과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대다수 국민은 빈곤에 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국가의 번영과 실패에 관한 기존의 주장과 대립됩니다.

기존의 견해 중 첫째, 지리적 위치 가설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지리적 위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가는 몽테스키외, 재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실제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각각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 요인 가설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대표적입니다. 베버는 종교개혁, 이를 통한 프로테스탄트적 윤리가 서유럽에서 근대 산업사회가 부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잘 나타납니다.

셋째는 무지의 가설입니다. 그 나라 국민이나 통치자가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해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를 교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통치자는 국가가 부유해지는 경제 정책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빈곤을 조장하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선택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가설을 부정하는 대표적 사례가 남북한 그리고 멕시코 국경의 노갈레스 남북입니다. 이 두 나라 혹은 두 지역은 같은 지역에 있고 문화와 역사가 같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극단적입니다. 결국 이 차이는 어떤 경제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적 경제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정치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에 책임지는 정부, 법치주의 국가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국민에 책임지고 법치가 확립되고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만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 간에 벌였다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을 연상시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용적 정치제도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와 부국에 큰 이유라는 이 학자들의 주장, 특히 제임스 로빈슨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지요—이 주장은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국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신분제 폐지, 자유의 제도화입니다. 한국적 개혁 사례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은 결국 인간의 정치적·경제적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를 통해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고 경제적 자유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결국 신분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국가의 구성원이 얼마나 정치적 주체로 독립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한국 역사 역시 대체로 그런 경로를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이성계파의 1388년 위화도회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전제 개혁이었습니다. 즉 논밭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고려의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였으나 무신 집권기인 13세기 중엽부터 사전이 발달했습니다. 14세기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며 사전이 급속히 발달했고 귀족들의 세습

가산으로 변모했습니다. 사전의 수조율은 10분의 1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1년에 대여섯 차례나 전조를 거두었습니다. 농민에 대한 착취가 한계에 이르렀고 국가재정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성계의 전제 개혁은 이런 심각한 폐해를 고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전법으로 불린 이 개혁을 통해 사전의 확장이 저지되고 수조율도 10분의 1로 낮춰졌습니다. 국가재정도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전제 개혁이 완료되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나 15~17세기에 걸친 조선의 인구 40%가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 대에 제정된 종천법이었습니다. 종천법은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모두 노비로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노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비 신분도 세습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배 계급이 대규모 인구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1669년 현종 대에 종량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는 유교의 기질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인간에게 인의예지의 성품을 부여하지만 기질의 품성에 따라 인간의 등급이 갈린다는 견해입니다.

한국 고유의 인간평등론은 19세기 말 동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학은 일체의 계급을 부정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물론 만물에 한울님이 깃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 역시 서자였습니다. 그는 득도한 뒤에 여종 둘을 면천시켜 수양딸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김구도 18세 때, 18살 때 반상의 차별에 회의를 느끼고 동학에 입도했습니다.

김구의 '백범일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투를 짜고 관을 쓴 걸 보니 분명 양반이었다. 그런데 내가 절을 하자 그 사람도 공손히 맞절을 하고는 도령은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동학도인이기 때문에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만 들어도 별세계에 온 것 같다. 또한 동학에 들기만 하면 차별 대우를 철폐한다는 말이나 앞으로 평등한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말에서 지난해 과장에서 품었던 비관을 넘어설 방법을 발견하였다'.

김구의 '백범일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에서는 신분제 사회를 넘어서려는 흐름이 강력히 분출하였습니다. 그런 흐름이 합류해서 1894년 동학혁명 같은 대규모 민란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학사상은 정치운동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근대를 이끌고 자유국가를 만든 것은 서구 근대사상을 받아들인 개화파였습니다.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전기 개화파도 신분제 폐지를 지향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때 김옥균 등 개화파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여 벼슬자리를 골라서 임명할 것이라는 개혁정강을 발표했습니다. 김옥균은 일본에 망명 중이던 1886년 고종에게 올린 지운영 사건 규탄서에서도 양반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김옥균의 '갑신일록' 구절입니다.

'방금 온 세계는 산업을 주장하여 서로가 생산하여 많은 것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를 때를 당하여 양반을 없애어 그 폐단의 근원을 없앨 것을 힘쓰지 않는다면 국가가 망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될 뿐입니다'.

개혁파 박영효는 백성의 자유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몫의 자유를 갖게 하여서 원기를 배양토록 하십시오. 하늘이 백성을 내려 주셨

으니 모든 백성은 다 동일하며 타고난 성품에 있어서는 변동시킬 수 없고 천하 일반에 통하는 불변의 도리가 존재합니다. 그 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를 구하여 행복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타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영효의 건백서입니다. 내정개혁에 대한 1888년 상소문 구절입니다.

이에 따라 박영효는 신분제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상·중·서의 등급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 나라는 동류의 사람들과 동조의 자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귀천을 정하여 서로 시집·장가를 못 가게 하고 상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드디어는 이류를, 서로 다른 종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박영효의 건백서입니다.

1894년 갑오경장 때 과거제가 폐지되자 청년 이승만은 서구를 배우기 위해서 배재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자각했습니다.

이승만 자서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배재학당에 가기로 한 것은 영어를 배우려는 큰 야심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영어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정치적 자유다. 기독교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그들의 통치자의 독재로부터 보호되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혼자서 우리도 그런 정치 이론을 채택할 수 있다면 짓밟혀 사는 나의 동족에게도 크나큰 축복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승만 자서전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에 따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단순한 독립운동기관을 넘어 모든 인민을 정치적 주체로 선언한 한국 역사 최초의 자유국가였습니다. 이론상 최종적이고 최고 수준의 국가개혁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도 기본적으로 상해임시정부의 개혁 방향을 계승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핵심 가치를 자유에 두었다면 북한은 평등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평등 이념도 완전히 사라지고 극도로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출신 성분에 따라 특별계층 1~2%를 차지합니다. 핵심계층 28%, 기본군중계층 30~40%, 복잡군중계층과 감시대상계층 30~40%로 나뉘어 대대로 세습됩니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무너진 북한은 그 뒤 침체와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

장 후진적인 사회로 떨어졌습니다.

1965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65%로서 북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GNP는 1975년 북한의 1.4배, 1985년 2.9배, 1995년 10.5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12.8배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725만 원, 북한은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54년간 남한의 1인당 GDP가 113.7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1.5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202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0분의 1, 즉 1.7%에 불과합니다. 남북한은 1948년 이후 76년에 걸쳐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는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붙어 있지만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3만 2000달러에 육박하며 유럽연합 평균에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남한은 또 특별한 나라에만 문호를 개방하는 OECD의 일원이다. 그만큼 경제 성과를 인정받고 삼성·현대·LG 같은 한국산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세계가 기꺼이 소비한다. 반면 북한은 1인당 소득이 1800달러에 그쳐 케냐 등 그나마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남아시아 국가와 다를 바가 없다. 북한산 제품을 사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남한의 평균 수명은 북한보다 10년이 더 길다. 심지어 북한 주민은 늘 기아의 위협에 시달린다'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A. 로빈슨 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한 대목입니다.

남북한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세계적 표본 사례입니다. 아제모을루 그리고 로빈슨 교수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아제모을루·로빈슨 교수의 책 내용입니다.

'한국인들이 모를 수도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영감을 얻은 이 이론이 주류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의 믿음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리적 위치나 자연환경에 따라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학자도 있지만 누가 봐도 한국에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이다. 한 민족의 문화, 사회규범, 가치관, 노동윤리 등이 경제적 성공 여부를 가른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그런 이론을 반박할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진 오랜 단일민족의 역사를 자랑한다.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것은 1945년 두 사회가 수립된 경위가 달라서지 문화 때문이 아니다'.

번영의 핵심 요인은 자유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착취적 경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북한 체제에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 주장의 진실은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한국이 계속 번영하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한국은 계속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자유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시장을 제한하거나 파괴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개방되고 민주화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비참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한 부분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혁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고 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도 국민주권의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처음 나온 곳은 지난 5월 15일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전남 순천 유세였습니다. 그는 최초의 민주정부는 국민의 정부라 부르고 참여정부가 그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모습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명서였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수많은 주권자의 의지가 모여 만들 우리의 꿈과 미래는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국민께서 밝혀 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이 개념을 재천명했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민주주의의 자살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인민의 이름으로 극단의 정치를 펼쳤고 인류를 불행에 빠트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개념 자체에 절대 권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유일무이한 권력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민주국가의 신과 같은 존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크빌에 따르면 절대 권력은 그것이 설사 국민의 권력이라고 해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Ⅰ' 15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무한 권능은 그 자체로 나쁘고 위험한 것이다. 무한 권능의 행사는 그 주체가 누구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인민이든 국왕이든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어떤 권력체에 전능한 권리와 능력을 부여한다면 나는 거기에서 악재의 씨앗을 본다'.

둘째는 현실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유일한 수권자로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자신이 곧 국민이라고 믿은 로베스피에르는 비판자를 반혁명분자로 단죄해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히틀러도 연설 때 항상 국민을 내세우고 자신과 일체화했습니다. 나치즘과 공산주의도 하나같이 국민과 인민을 유일하게 대변하는 총통, 대원수 같은 1인 독재 체제로 귀결되었습니다. 국민이 권력의 근원이지만 사실은 국민 없는 권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하면 이제 국민이나 인민이 최고지도자를 맹신하며 복종합니다.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은 마오 주석께 무한 충성하며 가장 견결히 최고 지시를 집행해야만 한다며 마오쩌둥 비판자를 인민의 적으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토크빌의 말처럼 전체로서의 국민이 모든 주권을 갖지만 사실상 개개 국민은 한 떼의 소심하고 일 잘하는 가축으로 전락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민주적

전제, 즉 데모크래틱 티러니(democratic tyranny)입니다. 이처럼 국민을 악용하거나 참칭하는 것은 국민이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 픽션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에드먼드 모건의 말입니다. 개개의 국민은 현실적 존재이지만 전체이고 하나로서의 국민은 가상의 실체입니다. 그런 국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뜻이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는 팩트 확인이 불가능한 하나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 원리 덕분에 민주주의가 정당화되지만 동시에 참칭된 국민주권이 신처럼 절대 군림하면 사회는 전체주의로 굴러떨어집니다.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짧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연성독재가 탄생합니다.

포퓰리즘 정치가는 국민주권을 직접 실현한다는 명분을 동원해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대중이 데마고그에게 쉽게 선동되는 이유는 자연적 인간이 본래 민주적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족적 존재이며 민주주의는 우리 두뇌에 선천적으로 각인된 것은 아닙니다.

정치학자 브라이언 클라스는 부족적 존재, 특히 부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는 적으로 인식된 집단을 비인간화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쥐라고 불렀고 르완다의 후투족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라고 불렀습니다. 반대 진영을 박멸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성은 포퓰리스트 정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야당에게 우리는 국민인데 당신은 누구냐라고 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나 언론 통제를 통해 100년 전통의 공화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수법은 헝가리, 베네수엘라도 이용했습니다. 놀랍지만 세계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그런 징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부정이라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에게 의회 난입을 부추겼습니다. 의회는 쑥대밭이 되었고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시위대 4명이 사망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민주주의라도 민주주의는 이처럼 선천적으로 취약합니다.

세계의 민주주의는 1974년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을 계기로 시작하여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동유럽이 민주화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그 물결이 쇠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대통령선거 때 트럼프 후보는 가까스로 암살 위협을 피했습니다. 얼마 전 9월 10일에는 미국 보수우파 정치논객인 찰리 커크가 암살되었습니다. 정치가 경쟁이 아닌 전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도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에 기대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매우 취약합니다. 영호남의 지역기반도 없고 언론, 노조, 기업, 교회 등 어디에도 강력한 지지기반이 없습니다. 유일한 기반은 강력한 팬덤일 뿐입니다. 그는 오직 개딸의 힘만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당권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이용해 사법부, 행정부 같은 전 국가기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마침내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이런 부족주의를 대표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성지지자인 이

른바 개딸들입니다. 이들은 2022년 대선 기간 동안 이 대표를 지지한 2030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에 맞서 2030 여성들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며 스스로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아빠, 잼파파로 불립니다.

대선 이후 이들은 강성 팬덤의 상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이재명에 비판적인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문자 폭탄, 좌표 찍기 등에 나섰고 그 조직력은 단순한 온라인 활동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강력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시위나 트럭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개딸들은 편향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반대파의 신상을 털고 정신적·물리적 위협까지 불사합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표적 피해자입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활동가 출신입니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선거 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양태를 비판하면서 개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있던 3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받은 문자가 몇만 개는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이 1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유튜버는 박 전 위원장을 비난하며 그의 자택 앞에서 공개 스트리밍 방송을 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온갖 보복 위협을 받아 왔기 때문에 주거지 노출은 실질적 위협이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말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어렵구나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팬덤 정치가 당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당 안에 들어오니 확실히 보이더라. 일부 목소리로 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개딸들도 진화했다. 과거에는 정치가들이 팬덤을 동원했지만 이제 팬덤이 정치가들을 지배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지난 9월 10일 여야는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단 14시간 만에 깨졌다. 개딸들이 밤새 누구 마음대로 합의를 하냐며 문자 폭탄을 퍼붓자 이튿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협상을 지시했다.

개딸들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의식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합의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 저는 그런 것을 몰랐다고 변명했다. 대통령조차도 개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개딸들의 협박에 결국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도 상황이 같다. 이 때문에 개딸의, 개딸에 의한, 개딸을 위한 민주당,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개딸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 정치의 형태라고 찬양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명분도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주의에 기대고 있다. 이른바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게 하는 법안 4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6년이나

이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서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중대 변혁이다.

우리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건 국가의 모든 수사권을 장악한 국가수사위원회가 결국 대통령의 시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국수위로서 국수위는 경찰, 중수청, 공수처와 특별사법경찰까지 지휘·통제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찰개혁안대로라면 경찰, 즉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은 행안부가 관할하고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게 된다. 이 모든 수사권이 정부의 수중에 장악되는 것이다. 중국식 신공안국가가 우려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국가수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 3명은 별도 추천위원회가 선출 및 추천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 169석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최소 6명을 임명하게 된다. 또한 위원 11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요컨대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수사를 지휘·통제하게 된다. 첫 시작은 국민의 뜻이지만 결론은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대처럼 강압적으로 수사기관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견제 없이 누군가를 수사하거나 또는 어떤 범죄도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연성독재의 특징이고 연성독재가 성공적인 이유이다.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금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부터였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개혁에서 국민이 소환되고 삼권분립도 공공연히 부정했다.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다음이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우위론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의 가장 근본적 논리다. 결국 국민주권주의인 것이다. 삼권분립을 존중하지만 자신과 자기 진영에 유리할 때만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렀다. 또한 대통령 후보나 당선자의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무죄를 선고할 거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다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 후보가 무죄면 재판해도 좋고 유죄면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통

령 당선 시 이 대통령 관련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사법이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대법관의 수를 늘린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늘린 자리에 친여 재판관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연성 독재화의 전형적인 수단이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는 대법관 20명을 30명으로 늘려 이른바 혁명적 측근들을 앉혔다. 이후 4만 5000여 건의 대법원 판결 중 단 한 건도 정권에 반하는 판결이 없었다. 민주화를 거친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도 같은 수법을 썼다.

언론개혁에도 국민이 등장한다. 방송 3법에 대해 홍보소통수석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에 대한 국회의 추천을 줄이고 임직원 단체, 변호사 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를 추천 기관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이 왜 국민을 대표하는지 근거가 없다. 또한 단체의 규모가 현격히 다른데도 친여 성향 단체에 동등한 추천권을 부여했다. 임직원 단체와 시청자위원회는 노조의 입김이 강하다. 국민을 운위하지만 사실상 정부 여당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계속 번영하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한국이 계속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자유를 심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주의에 따른 개혁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출간 기념회 기자간담회 때 말을 소개합니다. 민주주의를 독재로 바꾸는 일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 언론을 파괴하고, 둘째는 사법의 독립을 파괴합니다.

2500년 전 플라톤은 폭정은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민주주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적 다수제, 절대적 다수 의석은 모든 법안을 신속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함으로써 숙고하고 다방면으로 따져 봐야 될 자유시장경제 민주사회의 여러 법률 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고 어쩌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비록 하루지만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까닭은 절대다수의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기화로 그 환경 속에서 검증되지도 충분히 숙의되지도 않은 법을 한꺼번에 수십 개씩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심야에 이 방송을 지켜볼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밤늦게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의 부당성, 이 법안의 위험성을 직접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루씩 국회가 보장하는, 국회에서는 이제 모든 국회선진화법의 기둥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던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팽팽한 이견을 보일 때 의석수는 비록 다르지만 다수당과 소수당이 3 대 3 동수를 구성해서 90일 동안 충분히 숙의한 뒤에 그래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다수결로 정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국회는 동물국회였습니다. 야당은 수십 명의 의석만으로도 이 의장석을 봉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스크럼(scrum)을 짜면 국회 경위가 아무리 무술이 뛰어나도 그걸 떼어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장석으로 최루탄을 던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동물국회가 민주주의와는 크게 거리가 멀었고 국제적으로도 국격에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당은 다수당이었지만 소수당이었던 민주당과 합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국회법을 개정시켰습니다. 그 법의 큰 기둥이 바로 안건조정위원회였습니다. 숙의 정치를 보완한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때도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지만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득표율 격차는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선거구제의 무서움입니다. 민심을 물에 비유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그렇습니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고 한 표라도 부족하면 떨어집니다. 이런 소선거구제는 그 여론의 급변에 따라서 순식간에 엄청난 격차를 냅니다. 그런 격차 때문에 다수당은 절대적 다수 국민이 지지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수십 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집권 경험은 이제 여나 야나 똑같이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정책 전문가들, 정책적인 경험을 했던 장관 출신들도 여야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숙의하면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제 정치는 극단적인 목소리에 휘둘리면서 선악을 구분하고 흑백을 분리하면서 내 편과 상대방을 나눕니다. 나는 국민인데 너는 누구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당의 유혹이라는 것은 모든 법안을 생각한 대로 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내란특검을 무리하게 연장하고, 지금 이미 부산 검찰청 규모의 많은 검사들이 특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특검에 그렇게 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 사건은 아마 지금 뒷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더 보낸다고 합니다. 끝도 없이 수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효율과 적대적 정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했는데 조금 전 제가 읽었던 글에서도 나왔지만 강경 지지자들,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소리 없는 다수의 간절한 바람은 사라지고 목소리 큰 소수의 함성에 문자에 협박에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무제한토론이 비록 하루 만에 다 끝나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극단적인 또는 아주 강경한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항하지 못한 채 수많은 법들이 한꺼번에 통과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24시간 동안 민주당이 허물지 않는다면, 해제 결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속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는 이런 엄혹한 현실 때문에 비록 지켜보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여야 동료 의원들도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회가 십여 년 전에 만들었던 국회선진화제도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발동되었다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

대 3으로, 민주당 3 우리 당 3으로 해서 90일 동안 숙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정말 미디어·방송·통신의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큰 충격, 그 기쁨, '케이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서울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한국의 김밥을 먹는 방식조차도 외국인들이 배우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디어와 통신과 방송의 저력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그런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단 하나, 처분적 입법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려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이 법안을 민주당 내의 당내 이견도 물리치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의 큰 심도 깊은 논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압도적 다수결로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유혹을 조금이라도 끊어 내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동안 하루에 한 건씩밖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수 교수의 글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제임스 로빈슨 교수, 2024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서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같은 게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은 2003년, 2004년,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들과 비서관들과 함께 읽고 토론했다는 것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김영수 교수가 아까 그 글에서 한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 대한민국의 성공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패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왜 어떤 나라는 부국이 되고 어떤 나라는 빈국이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분명히 세웠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루에 한 건씩이라도, 하루에 한 건씩만이라도, 하루에 한 건씩밖에 처리 못 하도록 막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는 유혹 속에서 무더기로 우리 국가체제와 여러 경제질서와 또 외교·안보라든가 이런 민생을 자칫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무더기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심야에 아침 시간을 목표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벌써 한 대여섯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과 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그동안 함께 읽고 싶었던 글을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법치와 자유'라는 월간지에서, 법률방송이 만드는 법문화 시사교양지입니다. 여기에 마침 특집이 좋아서 제가 구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영수 교수의 글을 읽었지만 이제는 대담의 형식으로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 직접 함께 그걸 풀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자는 함재봉 교수입니다. 한국학술연구원장입니다.

성공하는 국가의 포용적 경제는 포용적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 결국에는 정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

을 앞서고 또 반도체에서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격차를 만들고 조선산업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이 성공은 우리가 포용적 정치제도, 우리가 비록 군사독재도 겪고 쿠데타도 겪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를 통해서 포용적 정치제도를 성장시켜 왔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분석을 한번 함재봉 교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유네스코에서 사회과학국장을 거쳤고 서던남가주대학의 한국과학연구소장을 거쳤던 함재봉 원장과 함께 대담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노벨상 수상 오래전에 이미 국내에서 번역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좁은 회랑' 등의 공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강의를 했고 지금은 시카고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서 국가의 번영과 몰락에는 제도적 구조와 권력 분배가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로 학계는 물론 각국의 정책 현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쳐 왔습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발전 경험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드문 사례로 꼽히는 국가, 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정치·사회적 분열과 산업경쟁력 문제 등으로 불안한 미래에 빠진 한국……

로빈슨 교수는 이번 대담에서 데이터 분석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가진 강점, 문화 영향력, 제도적 성취, 혁신 능력 등이 앞으로도 세계적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사회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질문과 미래를 위한 통찰과 관련해서도 그만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술대회로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간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2025년 세계경제학자대회 참석을 위해서 방한했습니다.

이 세계경제학자대회에는 우리 정부 예산도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계경제학자대회 예산이 축소되어서 이 행사가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많은 경제학자들의 걱정이 있었고 다행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세계경제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뒷받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유튜브 법률방송에서도 풀영상과 쇼츠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재봉 교수가 물어봅니다, '로빈슨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에 로빈슨 교수가 답합니다, '직접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제가 8월 19일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강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회는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큰 세계대회라 저 역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한국의 발전 경험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이를 이해하려고 꾸준히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2주간 휴가를 보내고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이고 첫 방문은 2년 반 전입니다'.

'그때는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로빈슨 교수의 답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서울대학교에서 몇 차례 강연을 했고 또

이곳에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경제사학자 김두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에게 연락해 여러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김 교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UCLA이지요, UCLA에서 유학 중일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남가주대학교—USC라고 그럽니다—에서 강의하고 있었고, 그를 지도했던 케네스 소콜로프 교수가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제가 케네스 교수를 통해 김 교수를 만난 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경제사학자인데 제가 관심 있는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저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어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한국 방문에서는 학회 참석 외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로빈슨 교수 답변입니다. 'KBS에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토론했고 다음 주에는 많은 강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한국의 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식을 더 넓게, 더 깊게 넓혀 가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로빈슨 교수의 답변입니다. '제가 본 한국은 성공한 사회의 전형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빈곤에서 번영으로 그리고 역동적인 민주주의까지 만들어 냈지요. 정말 놀라운 성취의 과정이에요. 한국은 창의성 면에서 특별한데 단지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산업제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화 전반에서 엄청난 폭발력이 있지요. 케이팝, K-뷰티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평생을 주로 라틴아메리카나 사하라 지역 이남의 아프리카처럼 성공적이지 못한 지역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탐구하는 게 제게 있어서는 오히려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입니다'.

'한국의 발전 성공 사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나라도 있을까요?'.

로빈슨 교수. '일본을 비롯해 대만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조금은 덜 성공적이지만 말레이시아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시아 외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나 보츠와나, 다른 지역에서는 남아메리카의 칠레 같은 나라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확연히 구별되는 아주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어떤 요인이 움직였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발전을 포용적 경제제도의 창출이라는 틀에서 바라봅니다. 일례로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크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대단히 추진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콜롬비아나 멕시코 같은 라틴아메리카에 있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나 그것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제동을 걸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서전 특성상 본인을 미화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열정과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느낀 건 바로 그겁니다. 라틴아메리카 연구자의 시각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큰 사회적 상승이 가능했던 사례라는 겁니다. 정 회장은 단지 몇 년의 서당 교육

만 받았을 뿐인데 그런 배경에서 출발해 사회적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기업가정신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포용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사회의 고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주 깊은 차원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세운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더 흥미롭습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기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한은 전혀 다른 제도, 전혀 다른 기회, 전혀 다른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층위는 정치입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진 독재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비교하면 군부시절조차 훨씬 더 포용적이었습니다. 물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정치적으로 결코 포용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이론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가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역동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됐고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시기에 경제성장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제 이론과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대기업집단이 급성장한 경험이 있지요.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그 시기의 정치적 비포용성이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것입니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것 역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함재봉 교수 질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경제발전을 위해 권위주의가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이군요'.

로빈슨 교수의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부분의 권위주의 체제는 그런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험은 매우 특수한 경우였다고 봅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 발전을 강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점이 여느 권위주의 사례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권위주의 지도자가 철강, 조선, 중화학공업 같은 기반산업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군수물자가 필요했거나 북한과의 갈등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는 한국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성공 공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군사독재나 일당체제 아래서 이렇게 엄청난 창의성과 역동성을 꽃피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발전은 보다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을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그리고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란 무엇인지 또 그게 한국을 이해하는 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빈슨 교수의 답변입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1950년대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의 연구 이후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은 혁신이라는 겁니다. 기술의 변화, 새로운 구상, 인적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 이런 것이 성장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혁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의 창의성, 발명, 열정, 다양한 시도와 계획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인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미리 알 수 없겠지요.

따라서 사회는 이런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포용적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포용적 제도는 광범위한 여러 사람들에게 동기와 기회를 열어 주고 혁신과 창의성이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착취적 제도는 소수에게만 이익과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에게는 길을 막아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은 북한보다 더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갖추게 되었을까? 그 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선택이 지금과 같은 경제 실정을 만든 반면에 남한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포용적 경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필요합니다.

포용적 정치제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권력이 충분히 넓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독재자의 의지에 따라 잠깐 경제가 좋아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포용적 경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저것 좀 보여 주실래요.

100쪽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 볼까요.

저 두 분의 대담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신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적 경제제도가 결국 포용적 정치제도에 대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부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재봉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교수님의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경제발전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이 비판적으로 보는 다른 경제발전 이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대안적 가설은 사실 그렇게 정교하게 체계화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이런 문제 자체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기본적으로는 세상 모든 나라는 결국 비슷하다. 모두 미국의 체제를 수렴하고 있다. 즉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일부 국가는 도중에 멈춰 섰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그 이유를 이른바 마찰이나 시장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의 역할은 그저 그런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등장했던 경제발전의 연구 모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나르 뮈르달, 아서 루이스, 라그나르 넉시 같은 초기 경제발전 연구자는 모두 근대화론을 제시했습니다. 즉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모두 결국은 같은 궤도로 들어서 부유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난한 나라는 어떤 특수하고 우연적인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본 것이지요. 이런 접근은 정치라는 요인을 거의 배제한 모델입니다. 그냥 성장 이론일 뿐이고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틀 속에 의견이 녹아 있는 겁니다'.

함재봉 교수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은 실제 이런 모형을 토대로 문제를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군요?'.

로빈슨 교수가 답합니다. '예, 제1세대 개발경제학자들의 그런 생각이 세계은행에 영향

을 주었습니다. 좋다, 우리가 가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자는 식이었지요. 사실 지금도 많은 개발경제학자가 여전히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 무렵 세계은행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전 속도가 느릴까, 어쩌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접근이 나왔습니다'.

함재봉 교수의 말입니다. '한국 관료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이 하라는 것과 정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로빈슨 교수가 답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 두 번째 파도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방향은 철저히 자유시장 쪽으로 흘렀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의 앤 크루거 같은 학자는 문제는 시장 왜곡이다. 과대 평가된 환율, 과도한 국유화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문제다. 그러니 민영화하고 왜곡을 없애야 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35년 전 워싱턴 컨센서스로 요약됐지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나라에는 우연한 왜곡이 있고 어떤 나라에는 없었다는 것처럼 설명했을 뿐 체계적인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잘못된 경제이론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예컨대 196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유화로 산업화를 시도한 이유에는 구소련이 그렇게 해서 산업화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 모형은 아니었지요.

이후 논의가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은 사실 정치인이 특혜를 만들고 이권을 챙기기 위해 만든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방어 같은 비생산적이고 부당한 활동에 자원을 경쟁적으로 낭비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런 국유화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이론 해설에는 정치인들이 특혜를 만들고 이권을 챙기기 위한 방식 때문이라는 설명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왜 어떤 나라에는 왜곡이 있고 어떤 나라에는 없는가에 대한 체계적 답은 부족했습니다. 제가 1980년대 후반 대학원생이 되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개발경제학 과목을 수강했지만 왜 세계가 이렇게 불균등하게 보이는가에 대한 전혀 만족스러운 답이 없었습니다'.

함재봉 교수가 묻습니다. '수천 명의 대학원생들이 같은 과목을 들었을 텐데 왜 하필 교수님만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로빈슨 교수가 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큰 패턴이 존재하는데 왜 설명하지 못하는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배경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릴 적 제 아버지는 평생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일하며 보내셨거든요'.

함재봉 교수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로빈슨 교수 답변입니다. "아버지는 기계공이었고 전기공학자였고 1930년대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공부한 뒤에 1930년대 후반 나이지리아 영국 식민행정 당국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이후 20년간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근무하셨고 결혼 후에는 곧바로 해외로 나가 카리브해 지역의 바베이도스와 트리니다드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생활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셨고 다시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관련 책과 지도가 가득한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누구나 '이 대륙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식민주의나 노예무역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역사, 특히 경제사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공부할 때는 더글러스 C. 노스와 로버트 폴 토머스의 '서구 세계의 부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서유럽의 정치·경제와 제도적 발전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전혀 다루지 않은 유럽 중심적 시각이었지만 저와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모두 학부 시절 이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1990년대 학회에서 더글러스 노스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정작 그의 연구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것은 왜일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 역시 식민주의와 노예무역 같은 거대한 역사적 체계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제도와 발전 문제를 연구에 들어갔을 때 이미 역사적·비교사적 관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시장 실패나 갈등 때문에 가난하다는 설명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따로 한 부분을 할애해서 잘 작동하지 않은 여러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예컨대 경제학에서는 무지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가서 가르쳐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 과장된 설명이지만 실제로 경제학계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지리 가설이나 문화론이 있었는데 내가 연구할 당시에는 특히 지리 가설이 대세였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가 강연마다 세계지도를 띄워 놓고 열대 지역은 본질적으로 가난하고 낙후된다, 반면 온대 지역은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요. 사실 이런 주장은 18세기부터 있던 오래된 생각인데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며 살면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은 처음 들어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열광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학계가 애초에 이런 질문을 던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세계가 이렇게 불균등할까, 이 지도에 보이는 패턴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질문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삭스 교수는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등장했고 그의 책은 삭스 교수보다 훨씬 더 그럴듯했으며 대단히 크게 주목받으면서 이런 지리·환경 중심의 설명에 더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리 가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연구를 통해 그것이 잘못됐음을 보여 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지리 가설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론에 대해서도 저는 선을 긋고자 했습니다. 물론 저는 요즘 문화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더글러스 노스가 제도를 형식적 제도와—즉 헌법·법률 같은 걸 형식적 제도라고 합니다—비형식적 제도, 즉 사회적 규범·관행 같은 것으로 구분했을 때 사실 후자는 많은 사람이 문화라고 부르는 것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지 않고 제도라는 틀로 설명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종교개혁이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

의 정신' 같은 종교와 경제 발달 논의를 다루면서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관심 가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문화적 차이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도는 결국 문화적 기반, 즉 규범과 가치 위에 서 있으며 그것이 특정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우리가 제도라는 루트를 택한 것은 경제학계가 훨씬 더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식민주의 같은 역사적 과정이 어떻게 많은 제도적 차이를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통해 세계 곳곳의 비교적 차이와 역사적 맥락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함재봉 교수가 물었습니다. "책 제목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인 게 흥미롭습니다. 왜 어떤 국가는 성공하는가가 아니고 실패하는가였나요? 많은 나라가 실패했고 경제학계가 그 실패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인가요?".

로빈슨 교수의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성공하는가의 답은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축해야 하고 투자해야 하고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당연한 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은 '왜 실패하는가'였습니다. 성공은 교과서대로면 설명이 되는데 실패야말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물론 북한에도 형편없는 경제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결과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제가 실패를 더 흥미로운 문제로 본 이유였습니다".

함재봉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의 성공은 교과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라 오히려 덜 흥미로운 주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로빈슨 교수 답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해요. 성공은 단순히 저축과 투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제도를 세우고 유지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저축해라, 투자해라, 재산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써 있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로빈슨 교수. '저는 한국이 포용적 경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0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는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았지요.

사실 제게도 뚜렷한 하나의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목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토지개혁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체제가 붕괴된 이후 토지 재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해석에 일부 공감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사회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본 것도 있습니다. 저는 포용성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데요.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유인원을 비교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예컨대 고릴라나 침팬지 사회는 훨씬 더 위계적이고 서열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보면 위계적인 구조에서 훨씬 더 평등한 구조로 대전환을 합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걸 변화시킨 거지요.

실제로 다윈도 관련한 가설을 제시했는데 그는 이것을 처형 가설(Execution Hypothesis)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윈은 언어의 발달 같은 변화로 인류사회가 달라졌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침팬지 사회에서는 알파—알파가 뭐냐 하면 집단에서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개체를 이야기합니다—수컷이 군림하는데 알파가 아닌 개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인류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 훨씬 평등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협력해서 알파 수컷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윈의 가설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더 큰 뇌 혹은 언어와 같은 능력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해서 알파 수컷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형 가설이라고 불린 거지요.

이 과정은 일종의 선택 작용을 만듭니다. 알파 수컷의 유전자가 도태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지나치게 권력을 독점하려 하면 집단이 힘을 합쳐 그를 제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게 다윈적 메커니즘이고 인간이 고릴라나 침팬지보다 덜 위계적이고 보다 평등한 성향을 갖게 된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농업과 도시가 생겨나기 이전까지는 인류사회가 상당히 평등했다는 겁니다. 민족지학적 사례나 유추를 통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근본적으로 평등적·포용적인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요. 다만 농업이 등장하고 도시나 왕, 종교와 같은 제도가 생겨나면서 그 포용성이 제도와 위계 속에서 잠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인간사회 속에는 언젠가 다시 드러날 준비가 된 어떤 포용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고 토지개혁과 혼란 그리고 미군정의 개입 같은 요인이 결과적으로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지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다시 말해 민간 부문이나 사회, 법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고착시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흥미로운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의 한국 정치가 곧바로 포용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훨씬 나중에야 정치적 포용성이 등장했지요.

또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먼저 권위주의를 거쳐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보편적 경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반드시 포용적 정치제도보다 뒤에 오는 것도 아니고 두 개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과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리와 변수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패턴은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먼저 나타나고 이후에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따라온다는 것이 우리의 실증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공식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함재봉. ‘공감합니다. 예컨대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해 보지요. 평범한 한국인에게 정주영 회장과 그가 이끈 기업의 문화를 묻는다면 대단히 권위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자식을 엄격하게 다스렸고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도 완전히 독재자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아마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교수님이 말한 한국의 포용적 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삼성그룹 같은 다른 기업가 집단의 지도자도 다 비슷했어요. 각자의 영역에서는 모두 권위적이었는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구조를 만들어 낸 거지요’.

로빈슨. ‘물론 그 속에도 진입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끊임없는 유동성이 존재했지요’.

함재봉.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유든 다른 요인이든 그런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류 사회는 오랫동안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였는데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입헌군주제라는 체제를 이행할 수 있었는가 이건 지금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마그나 카르타에서 명예혁명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맞물려야 하는 여러 요소가 있었고 교수님은 책에서 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를 돌아보면 위계와 권위주의야말로 오히려 사회에서 기본값 같아 보입니다. 저는 현대사회가 된다는 건 결국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인종, 민족, 성별, 나이 등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평등하게 대하는 게 현대사회의 기준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심지어 한 살 차이만 나도 아래위 서열이 나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언어 속의 예절이나 존칭 같은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복잡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경험이 흥미로운데 유럽의 외딴 변방, 사실상 후진 지역에서의 변화가 점차 퍼져 나갔습니다. 그 흐름은 결국 미국으로 이어졌고 다시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을 놀랍게 생각합니다. 포용적 제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처음 등장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식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 말입니다. 물론 호주 같은 곳도 있지만 결국 대영제국 문화가 확산된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처럼 전혀 다른 곳에까지 정착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교수님의 책을 읽으며 역사 속에서 한국이 아주 작은 기회의 창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특히 현재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이해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로빈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분명 영국의 경험은 상징적입니다. 산업혁명이 그곳에서 시작됐고 그것이 현대적 경제성장을 촉발했으니까요.

함 교수님 말씀대로 인류사회의 대부분은 위계적이었지만 동시에 지난 250년 전까지는 거의 모두가 빈곤하고 기술적으로 정체된 사회였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국 사례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1차

적 국가 형성, 2차적 국가 형성을 구분합니다. 아무런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처음 만드는 과정과 이미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를 새로 세우는 과정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국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국가가 있는 세계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공격하거나 모방하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이동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말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제임스 와트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으려면 수많은 사회적 변화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런데 영국이 그 길을 열자 일본은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면 무사 계급을 없애야 하고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워야 하며 제대로 된 재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요소만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했던 모든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구분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1960년대 알렉산더 거센크론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모든 나라가 영국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포용적이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연구라는 것은 개인적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자라 온 환경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연구했던 여러 지역 말입니다. 제 경우에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연구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것을 읽어 보면 콜롬비아,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같은 제가 직접 연구했던 국가의 사례가 가득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전부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같지는 않습니다.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는 보통 중국을 논할 때 가장 뜨겁게 제기됩니다. 제 시각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포용적 정치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박정희 시절과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지만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성장도 결국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맥락이 다르다는 주장이에요. 앞서 말했듯 중국은 산업혁명을 처음부터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현대적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필요한 조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적 기반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모방하거나 채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알렉산더 거센크론의 논문도 이런 면을 보여 줍니다. 그런 현대화로 가는 길은 단 하나가 아니며 국가마다 다른 대체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자기 방식으로, 독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산업화를 이룬 것처럼 말이지요.

사실 올해 1월 홍콩대학교에서 이 주제에 대해 강연했는데 중국에 관한 제 견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가설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국만의 문화적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그들만의 특색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주의일 것입니다.

저는 많은 중국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사회적 이동성입니다. 예컨대 지금 제가 지도하는 만주 출신 박사과정 학생, 정치학과에 있는 농촌 출신 동료 또 UC 샌디에이고에서 교수로 일하는 제 제자 역시 중국의 외곽 지역 출신입니다. 중국에 이렇게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 인도 학생은 대부분 극소수 엘리트, 예컨대 브라만 계급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회학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며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의 논리가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가를 설명했지요. 그런데 홍콩대 교수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당신이 쓴 책에서 주장한 것을 고수해라, 그게 맞다 이렇게 말이지요.

오래전에 저스틴 이푸 린 교수 초청으로 베이징대에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입니다. 다만 그것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나오기 전이고 제 생각도 지금처럼 발전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경험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중국 학계와 이런 주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언젠가 중국 학자들과 진지하게 대화해 보고 싶습니다".

함재봉 교수 말입니다. "저는 교수님 책에서 특히 특허 제도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일본 경험을 살펴볼 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대표적 학자이자 게이오대학교 창립자를 주목했습니다. 일본식 계몽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 낸 인물이기도 해요.

후쿠자와가 미국과 유럽을 방문했을 때 남긴 일기와 보고서를 보면 그는 항상 특허청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흥미로운 제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우리도 반드시 특허청을 세워야 한다' 하며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쿠자와가 특허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보니 지식이라는 건 본래 특허를 내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문화권에서도 원래는 지식은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변화가 생겼고 아마도 그건 산업혁명이 배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만 특허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도 근대성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하준 교수가 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특허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한 나라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다 가져다 썼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불법시장이나 위조상품이 넘쳐 났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가짜 명품시장이 크지요. 수천 개의 가짜 구찌 가방이 원본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가격은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로빈슨 교수의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선도 경제와 추격 경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허가 없었다면 애초에 뒤따를 경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가 말하듯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발명된 것을 그냥 공짜로 베끼는 게 최선의 개발 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요. 그 자체는 이해할 만합니다. 다만 그것은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함재봉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 가 볼게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 같은 압박을 많이

받아 느낍니다. 중국의 미래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 보면 거대한 인프라를 보며 모두가 감탄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게 없다, 영국은 다 낡았다, 공항이며 쇼핑몰, 고속철도까지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저 나라는 정말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에 있지 않다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증거를 주목해야 할까요?'.

로빈슨 교수의 답입니다. "결국 제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사용한 비교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시사점을 준다고 보는 게 소련의 사례입니다. 제가 40년 전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소련 모델을 보라,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가 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이해조차 못 하겠지요.

1920년대 중반부터 50년간 소련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인프라도 건설했고 독일군을 물리쳤고 우주기술에서도 혁신하면서 최초로 인간을 우주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경제학자 세대들을 속였고 CIA도 속였고 심지어 자신들의 지도자까지 속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과 소련은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그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현혹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중국은 규모도 크고 인상적이지만 소련 역시 그 시절에는 크고 인상 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중국을 볼 때 소련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관점이 틀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중국만의 문화적 논리가 존재해서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직관이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겠지요. 하지만 중국의 역사, 심지어 최근 역사까지 살펴보면 그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오쩌둥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물론 이번에 반복될 형태는 문화대혁명과는 다르겠지만 무언가 다른 방식의 위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언제, 어떤 형태일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시진핑 주석이 지금처럼 개인 권력을 축적하고 고착화한다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는 다른 규칙이 있다, 다른 문화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설명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라면 재앙이 되고 영국에서라면 재앙이 될 상황이 중국에서만 재앙이 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설명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함재봉 교수의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의 경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비유는 박정희 시대일 겁니다. 막강한 권위주의 지도자가 당시 매우 부족했던 자원을 동원해 초기 경제성장을 만들어 냈던 시기 말이지요. 이는 초기 소련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일 겁니다. 사실 권위주의 체제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중에도 중국을 보며 시진핑 같은 지도자가 진짜 리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속철도를 건설하자고 하면 바로 건설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지요'.

로빈슨 교수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체제에서는 동시에 거대한 수용소를 만들고 사

람을 강제로 집어넣어 노동시키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게 권력집중의 위험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보지요. 저는 이것이 현대 자유주의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제모을루 교수가 흥미로운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근대 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역사, 예컨대 미국의 뉴딜을 보면 규제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와그너법 같은 법과 제도 말이지요. 그 결과 일부 자유주의자 사이에서는 규제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같은 논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도를 새로 짓는 것조차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는데 이미 수억 달러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는 그런 제약이 없으니 무엇이든 빠르게 해낼 수가 있지요. 이것이 현대 서구 민주주의국가가 가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규제와 제도가 실제로 성과를 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논리가 지나치게 확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새로 추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독일은 군부가 국가를 장악했고 루덴도르프와 힌덴부르크가 모든 걸 지휘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노동조합이 파업했고 연립정부는 사소한 문제로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많은 사람이 독일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있는데 영국은 혼란스럽다, 전쟁은 독일이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독일은 하나의 전략에만 매달렸고 그 전략이 실패하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반면 영국은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지만 이 전략은 안 통한다, 다른 방식을 시도하면서 계속 배워 갔습니다. 당시는 재앙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훨씬 더 나은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학습하고 조정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힘이 있는 거지요'.

함재봉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 5월 한국에서 강연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시 교수님 강의는 한국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산업구조나 인구 대비 특허 수 같은 지표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국민에게 앞으로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역동성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정치가 내부 갈등으로 갈라져 제로섬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세대 갈등, 정치 양극화 같은 문제 말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걱정한 덕분에 다가올 위기를 미리 막아 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은 살기 굉장히 힘든 곳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겉으로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가 늘 불안의 가장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테니까요.

제가 이런 한국의 현실을 들려 드리면 교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적어도 교수님의 객관적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되나요? 경제학자의 시선이 아니라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현대사회의 특징,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빈슨 교수의 답변입니다. '제 생각에 어떤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발전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취를 거의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예시를 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문화적 폭발, 이를테면 K-뷰티, 케이팝, 한국식 바비큐 같은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제 친구의 15살 딸이 런던 서쪽에 사는데 그 아이는 한국에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한국이 그런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킨 거지요. 이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를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고 저는 이게 한국의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경제적 성공 상당 부분은 미국 문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말보로 담배, 서부극, 존 웨인, 할리우드 같은 것 말이지요. 이런 문화적 힘이 엄청났습니다. 한국도 지금 같은 일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하지 못했고 다른 어느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허나 경제성장 부문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은 엄청난 성취를 이뤘습니다. 산업화를 이루면서도 불평등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특히나 인상적입니다. 중국은 양극화가 엄청 커졌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고 나 역시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를 떠올려 보면 한국은 늘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자서전을 읽어 보면 북한군이 두 차례나 서울을 점령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공장이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한국인이 이런 경험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낸 나라입니다. 어쩌면 위기와 도전에 너무 익숙해져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닐 때조차도 스스로 위기를 찾아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의 도전 과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심각한 부패 문제를 겪어 왔고 군사정변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낸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 함재봉 교수와 로빈슨 교수의 대담을, 법률방송 주체의 대담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 법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강력하게 키울 것인가, 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케데몬의 성공을 가지고 그 모멘텀을 이어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K-콘텐츠를 어떻게 강력히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침 로빈슨 교수의 답변에서도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로빈슨 교수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딸은 15살이고 런던 서쪽에 산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을 다른 유럽 국가도 세계에 심어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전례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지금 닥친 외교안보, 특히 통상외교, 관세 마찰의 문제도

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문화의 힘이고 우리가 방송·미디어·통신을 통해서 지금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라는 걸 통해서 대박을 터뜨린 대부분의 콘텐츠의 원천이 한국에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미디어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창작자들, 제작자들 그리고 이걸 배급했던 OTT 같은 곳은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가지고서 글로벌 OTT만 대박을 터뜨리는가?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기업과 개인과 창의적인 콘텐츠의 소재가 있었는데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10여 년 전에 넷플릭스가 아마도 우리나라의 KBS·MBC보다 더 투자 여력이 작았을 때가 있을 거고 또 CJ ENM보다 더 작은 회사였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우리 한국의 콘텐츠로, 우리 한국의 PD, 한국의 감독, 한국의 영화배우 또 한국의 소재로 세계적 시장에서 그렇게 큰 수익을 얻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그 당시 넷플릭스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콘텐츠 창작자 또 제작자 또 그걸 배급하고 방송하는 방송사가 있었는데 지금 10년 만에 왜 이렇게 상황이 역전됐는가? 그것이 바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창설 이후에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 환경을 융합해서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방미통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 또 방송이 같이 결합되고 초기에 우리나라 방송이 크게 싹을 틔웠던 그것들을 수확해서 국가적 전략 부문으로 키워 내고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고 더 큰 희망을 안겨 주고…… 그리고 지금 로빈슨 교수의 친구 딸, 런던 서쪽에 사는 친구 딸이 한국을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걸 바탕으로 왜 우리는 우리 방송사와 우리 통신과 우리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넷플릭스에 종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논의하고 있는 방미통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개편 법안을 정부가 스스로 철회했듯이 이제 방송미디어통신학회들의 간절한 염원 또 심지어 진보단체들, 진보적 언론조차도…… 25일을 잡아서 이날 꼭 서둘러서 처리할 법도 아닐뿐더러 이 법에는 더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민간 자율기구를 공무원화 해서 오히려 국가가 방송·통신을 검열하겠다라는 이런 잘못된 내용도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된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절절한 요구들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이어 가겠습니다.

함재봉 교수가 묻습니다. ‘지난 5월 강연에서 마지막에 도표 하나를 언급하셨지요? 정치적 논쟁도 언제나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던 것 말이에요’.

로빈슨 교수 답변입니다. ‘오버톤 윈도우(Overton Window), 즉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발언이나 행동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서 충격적 사건이나 발언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예전에 금기였던 것을 정상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을 오버톤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 도표는 사실상 오버톤 윈도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독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예로 들면서 그때 나라가 잘살았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경제

성장률이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일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권위주의를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다만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네요'.

함재봉, '지금 한국 사회가 걱정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입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요. 한국이 수출하려는 많은 제품이 중국 제품과 겹치고 있어서 이제는 중국이 그 시장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제 생각에 조선·자동차 같은 중공업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다음 단계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로빈슨,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첫째, 자본주의는 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현대그룹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현대는 원래 건설회사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조선회사로 변신했을까요? 정말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산업을 시작했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으며 흥미롭게 느꼈던 건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그걸 잡아내는 데 아주 능숙하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입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지요. 한국은 모든 석유를 수입했기 때문에 당시엔 국제수지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지 고민했습니다. 돈은 중동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중동은 대규모 건설을 구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현대가 그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틈새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빈틈과 기회가 생길 것이고 한국은 그걸 잡을 겁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지난 50~60년 동안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 온 원동력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함재봉, '이야기를 듣고 보니 현대그룹과 정주영 회장을 언급하셨던 게 떠오릅니다. 교수님께서 자주 예로 드시는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멕시코 텔맥스텔레콤 회장이랍니다—같은 인물과 비교해 보면 정 회장의 경우는 누군가가 그의 길을 막았다거나 다른 기업가의 성장을 억눌렀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지요. 그 점이 참 인상 깊어요'.

로빈슨, '맞습니다. 적어도 정 회장의 자서전에는 다른 사람을 막았다거나 경쟁사를 억눌렀다는 일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함재봉, '이건 한국인 입장에서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 같아요. 한국에서는 기업가들이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일단 정부와 연결되면 나머지 경쟁자는 사라지는 식이었다고 이해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대기업 성공 일화를 두고 이중적 감정이 있습니다. 재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졌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벌이 너무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불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에는 고평가 비상장기업, 그러니까 유니콘기업이 더 많지 않을까, 왜 차세대 기술혁신이 조선이나 전자 산업처럼 성장하지 못할까 질문이 나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신생 기업의 기술을 인수하거나 막아 버리는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재벌의 정당성은 과거의 성공에서 비롯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창의를 파괴하는 기득권이 되어 버린 거지요'.

로빈슨,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대가 모든 혁신을 해낼 때만 해도 해당 산업 분야에서는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산업에서든 모든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재계 현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빅테크 기업이 왜 그렇게 큰 규모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혁신하려면 엄청난 자원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재벌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재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출간 이후 교수님의 이론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겠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로빈슨, "최근 몇 년간 아제모을루 교수와 함께 여러 주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많은 자료를 읽었는데요. 아직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이 문제를 다루는 대규모 논문을 발표했는데 바로 문화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탐구한 연구입니다.

요즘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 스스로 보기에 이 책을 가장 근본적으로 비판한다면 지나치게 물질적 요인으로만 설명했지 사상의 역할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명예혁명을 다루면서 존 로크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크의 '정부론'은 명예혁명에 있어서 성경과 같은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왕정을 비판하며 헌정 정부의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할 때도, 더 나아가 서구사회나 미국에서 포용적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이야기할 때도 사실 그 밑바탕에는 자유주의적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은 오히려 반자유주의적 성격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저와 아제모을루 교수는 문화라는 주제를 연구하면서도 특히 이념과 사상이 제대로 뒷받침하거나 혁신을 이끌고 지속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자유주의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상당수가 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신뢰하지 않는데 이건 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도전이라고 봅니다".

함재봉, "그렇다면 '좁은 회랑'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후속작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로빈슨,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착취적 정치제도는 두 가지 차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역량, 둘째는 정치적 권리의 광범위한 분배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착취적 정치제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소말리아의 경우 정치적 권리는 폭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국가 자체가 부재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강력한 국가는 존재하지만 정치적 권리가 폭넓게 분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착취적 제도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좁은 회랑'에서는 이런 차이를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즉 국가와 사회의 균형이라는 틀에서 보면 소말리아는 사회가 국가를 지배한 경우이고 중국은 국가가 사회를 지배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각 사회가 왜 그런 역동성을 갖는지 또 어떻게 해야 더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한 포용은 국가와 사회 사이의 균형 속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좁은 회랑'에서 우리가 시도한 첫 번째 통찰은 착취적 제도라고 하더라도 모두 똑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더 유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각 제도의 차이와 그 역동성을 보여 주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부족한 점 중 하나는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바꾸는 것은 스위치를 켜듯 단번에 되는 일처럼 들린다는 점이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긴 과정이 듭니다. '좁은 회랑'의 핵심은 바로 그 과정성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이른바 붉은 여왕 효과처럼 국가와 사회 사이 끊임없는 경쟁과 상호작용이 이어진다는 의미지요".

함재봉 교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로빈슨 교수의 연구 방향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내년에 출간 예정인데 막 계약을 마쳤습니다. 가제로 '인적자산'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5년간 연구하며 얻은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은 모든 것이 사회적 관계와 연결망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모두 이 논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사회를 설명할 때 이 인적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사회적 관계 위에서 형성되고 운영된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심적, 조상 숭배, 종교, 사회적 연결망 등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아프리카에서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흥미롭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사회와 가족을 출발점으로 삼고 곧바로 국가라는 제도를 인간의 복지와 선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국가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로마·서구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샤를마뉴 같은 사례도 있지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국가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지역 안에 중앙집권적인 여러 왕국을 봐도 주권을 결코 국가라는 것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은 언제나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더 작은 단위에 있었습니다. 위계질서가 있기는 했지만 그 정점에 있는 사람도 국가적 주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함재봉,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로빈슨, '저는 그것을 다르다고 봅니다. 예컨대 아프리카를 두고 흔히들 모든 것이 종족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분할 시기였던 1880년대 무렵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회가 종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약 4만 5000개의 독립된 정치 단위가 존

재했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분권화된 사회였던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아프리카의 근본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실제로 원했던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가 생기지 않도록 일부러 이렇게 제도를 설계한 경우도 상당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동아시아의 천명 같은 개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럽은 아프리카와 달리 씨족이나 친족 같은 조직이 발달하지 않았고 개인·계약·영토 단위의 대규모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했지요. 스코틀랜드가 예외였을 뿐입니다. 게르만 부족도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와 달랐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동아시아의 전통 종교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가족과 씨족, 친족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아프리카와 달리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함재봉, '공공이라는 개념이 있었지요?'.

로빈슨,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함재봉, '교수님 이야기는 이런 것을 근대화론 같은 구조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아프리카 자체에 주목한다는 것이지요?'.

로빈슨, '맞습니다. 이 책은 철저히 아프리카에 관한 책입니다. 다만 비교를 위해 한 장을 할애했는데 그 장은 조금 도발적이기도 합니다. 40페이지에 달하는데요. 독자라면 누구나 왜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권화된 길을 걷게 되었을까, 왜 인적자산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사회와 경제를 조직하는 원리가 되었을까, 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뉴기니, 아프가니스탄, 아마존 지역 같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할 때마다 어떤 단일한 특수 요인에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프리카에서는 동아시아나 서구, 심지어 메소포타미아에서조차 나타난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빈슨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노벨상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 상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지요. 저는 늘 아제모을루 교수가 받으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이고 저와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와 수년 동안 함께 연구해 왔고 서로 잘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그는 훨씬 더 주류에 속한 학자입니다.

저는 26년 전에 경제학계를 떠났습니다. 경제학이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정치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경제학자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아제모을루 교수는 경제학계에서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논문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제가 관심조차 없는 경제학의 수많은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거목입니다. 알고 지낸 게 30년째인데 매번 새로운 면모로 저를 놀라게 합니다. 사실 그가 언젠가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와 사이먼 존슨 교수까지 함께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빈슨 교수의 마지막 말로써 이 두 사람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노벨상 수상 연설 마지막 부분의 제목이 양방향 도로였습니다. 투웨이 스트리트(two-way street)요. 경제학과 개발경제학은 그동안 서구학계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울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었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방향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을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제가 속한 사회와 나의 조국 역시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꼼꼼하게 뭘 연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아프리카라든가 또 중국을 연구하면서 비교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여러 흥미로운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 왜 지난 80년 동안 이렇게 성공했는가, 그것이 포용적 체제와 착취적 제도라고 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이 되면서 북한은 소련의 공산권에 편입이 되고 우리는 미국의 서방 진영에 편입됐다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같은 독일이 분단되면서 동독은 소련 체제에 편입되고 서독은 서방 체제에 편입됐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나라가 똑같은 분단을 겪었는데 비슷한 양상으로 그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김영수 교수가 이 책에 썼던 대한민국의 수립과 신분제 폐지, 자유의 제도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등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 김구 ‘백범 일지’에 나왔던 천도교에 대한 한국의 인간 평등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새로운 근대국가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생각합니다. 특히 개화파가 한국 근대 자유를 이끌고 자유국가를 만들었던 김옥균의 편지라든가 박영효의 주장 또 이승만의 각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을, 제가 필리버스터 이 새벽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성공하는 국가의 포용적 경제는 포용적 정치에서 비롯된다라는 이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뜻밖에 대한민국 문화의 힘이 로빈슨 교수의 친구의 딸, 한국을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고 런던의 서쪽에 살던 15살 소녀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그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를 아시아에 설치하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경상남도에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할 방안을 찾으려고 한번 일론 머스크를 만나러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국가 정상급만 만나는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 우리 대통령도 만났고 그다음에 모디 총리도 만나고 했는데 저는 그 부회장,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면담에 배석했던 그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회장을 뉴욕에서 만났는데 뉴욕에서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가 어젯밤에 COTE라고 하는데 그게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식당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너무나 줄을 많이 서서 한참 기다렸다는 이야기 또 자기 딸이 한국 걸그룹을 좋아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걸그룹 이름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광하던 기억이 납니다. 한류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세계경제에, 세계의 유명인사들 사이에서도 그 인식을 사로잡

고 있는지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이 방미통위법을 오늘 표결하는 것을 멈추시고 이 법안은, 저희들은 방송법 개정안 때와 달리 이 법안은 정말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큰 융합 그리고 큰 거버넌스로 바꿔야지만이 우리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혹시 계십니까? 지금 슬라이드 2번 보실 수 있을까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열광했던 그 환희, 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부 우리 이야기고 물론 영어 노래도 있지만 영어 노래도 보면 한글 대사가 계속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 한글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르면서도 그대로 따라 부르고 떼창을 하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 라면이라든가 김밥을 먹는 거라든가 또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에서까지도 호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대단히 새로웠습니다.

한국 문화로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걸 제가 아까 초반야에 처음 시작하면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결국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방송·미디어의 융합 거버넌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 강력한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하고…… 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결국 한류가 우리나라의 OTT라든가 우리나라의 방송, 한류를 처음 만들었던 한국의 방송사나 한국의 통신, 한국의 미디어업계로 수렴되지 않고 글로벌 OTT에게 거대하게 수확을 안기고 우리는 거기 종속돼 가는 사실을,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분투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진흥책을 만들고 또 우리 정부가 그렇게 삼중 사중의 규제를 하지 않고 규제 환경을 새롭게 했다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대해서도…… 이 법이 단지 한 사람, 지금 장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이 방송통신위원장만,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정무직 공무원만 나가라는 것이 이 법의 실체이자 그 이유만이 이 법을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한다면 이제 멈추시고 정말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그 거버넌스를 새롭게 일으켜서 우리의 뛰어난 한류 콘텐츠 역량을 우리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의 융합 거버넌스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다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더 멋진 일자리를 주고 대한민국의 매력을 더욱 넓히는, 그래서 지금 통상과 이런 관세 갈등의 충격 속에서 위축돼 가는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만들자라는 그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좀……

혹시 우리 보좌진이 있으면 다음 주자가 민주당 의원일 텐데 한 6시쯤은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좀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화장실 다녀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의원님과 대략 약속하기를 6시쯤 바꾸기로 해서 6시까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인가, 왜 저것을 갑자기 지금 프리젠테이션 화면에 비췄는가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바로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정말 제대로 제정하려거나 개정하려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엄청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상을 방송·미디어·통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지 않은 채 이것과 전혀 무관한, 방송·미디어·통신 업계 전문가들의 간절한 열망과 시민사회단체의 여망도 저버리고 이렇게 이른바 위헌적인 처분적 입법을 위해서……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약간 개정만 하면 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법에 한두 개 부서만 더 들이면 될 것을 굳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만들어서 제정할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법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방송 3법 개정 때와는 달리 이 법에 대해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여야가 비슷한 공약을 내세워 왔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방송과 통신이라는 게 이전에는 방송이 다르고 통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정보통신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그냥 방송만 하는 위원회였고 정보통신부는 당시에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그때는 한동안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빨리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전자교환기 들어오면서 정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선친이 처음에 체신부에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정보통신부 때까지 아마 근무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가, 전화국이 정보통신부 소속이었는데 전화국이 KT로 공기업으로 분리되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두 개에서 정보는 떼고 통신과 방송위원회를 합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을 거치고, 1988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정보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룹니다. 약간 어색한 이야기지만 1984년에 LA올림픽을 했는데 LA올림픽 때까지만 하더라도,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은 반쪽 올림픽이었을 뿐 아니라 전화조차도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합니다. 통신 인프라가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LA에서 열렸던 LA올림픽 역시도 통신 인프라가 좀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은 통신 인프라, 전전자교환기를 개발하고 하면서 엄청난 정보통신 대국으로서의 기반을 보여 줬었지요.

당시에 통신이라는 것은 아직 인터넷이 나오기 전이어서 전전자교환기, 이전에는 전화기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전전자교환기로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 또 올림픽 이렇게 거치면서 정말 전화 통신 환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었지요. 그걸 바탕으로 하이텔 같은, 천리안 같은 인터넷이 전화선으로 연결되는 이런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던 시기하고 방송은 전파를 이용했기 때문에 많이 다른 장르였지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6년, 2008년 되면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것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졌고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방송·통신의 융합을 이루어서 더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OTT라는 게 등장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숏폼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텔레비전보다 오히려 그걸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에 미디어의 대융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지상파도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수익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지상파가 유튜브를 경영하는 마당에…… 그리고 또 방송사들이 '대장금' 같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큰 드라마라든가 또는 케이팝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내면서, 이것이 또 외국의 방송이 아니라 외국의 OTT로 소개되면서 큰 선풍을 일으키는, 그래서 새로운 방송과 통신과 미디어의 대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0년 대통령선거 때도 양당이 모두 방송과 미디어와 통신의 융합을 그리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만큼 이 문제는 정말 양당 모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특히 최근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쇼크, 저 놀라운 환희, 한국문화가 세상에 이렇게 열광을 얻을 줄이야, 미국의 극장에서 모여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떼창을 하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예전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환경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진짜 이제는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 막 유튜브가 나오고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고 또 소셜미디어가 새롭게 나오고 여기에 숏폼 같은 동영상 서비스가 강화되고 또 OTT가 처음으로 나오고, 이런 시기를 벌써 10년이나 우리가 놓친 겁니다. 10년이면……

넷플릭스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16년이니까 이제 9년이 지났지요. 9년 사이에 완전히 넷플릭스가 우리 토종을 다 장악을 하고 지금 우리 방송통신미디어는 넷플릭스에 종속된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왜 우리 정부의 지원 시스템 또 규제환경이, 왜 우리는 일찌감치…… 2010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콘텐츠 면에서라든가 스토리텔링이나 리듬이라든가 케이팝 가수와 케이팝의 인기를 만들어 내는 회사들이 더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OTT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우리 방송사의 큰 드라마들이 전 세계 히트를 쳤는데, 드라마를 수출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는가라는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초반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디어·방송학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있었고 새 정부 초기에 반드시,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일인 만큼 새 정부 초기에 힘이 있을 때 결심을 해서 하자 이런 논의가 준비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다시 표결을 하게 될 이 법안은 그런 논의와는 전혀 다른 궤도고 실제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모멘텀을 살리기는커녕 이 모멘텀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행적인 법이다,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논의는 외면한 법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사회와 진보 언론조차도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나, 25일 날 이거 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보시겠습니다만—다음 페이지 보실까요—이게 해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한국도 아마 직접 이걸로 해서 큰돈은 못 벌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 상품들의 인기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통상협상, 관세협상에서 여러 가지 복병이 나타나서 일본과 유럽은 15% 관

세를 물게 됐지만 우리는 아직 25%가 되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서 고전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든가 케이팝, K-컬처 때문에…… 아까 로빈슨 교수의 친구 딸이 런던 서쪽에 사는데 한국을 엄청나게 멋진 나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라고, 자기는 한국에 한 번도 와 본 적도 없는 15세 소녀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됐다는 것은 케데헌 같은 이런 한류의 큰 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상 관세협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어쩌면 이 덕분에 그나마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 또 한국 상품이 아주 고급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선전한다는 것은 제가 특파원 하던 시절부터, 2006년 2009년 그 시절만 해도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직후에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격 경쟁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품질 경쟁력도 밀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케데헌 같은 케이팝이라든가 K-한류, K-푸드, 코리아 웨이브, K-웨이브의 매력이 우리 상품의 여러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고 조금 개정하고 아니면 실제로 완전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될 텐데 이게 그냥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미디어' 자 하나 붙여 놓고 공무원 몇 명 더 보태고 해서, 다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만 찍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법제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졸속일 뿐 아니라 이 시기에 해야 될 시대적 과제를 오히려 엉뚱하게 소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산 제품 검색량이 10배가 폭증했던 이 모멘텀을 우리가 이 법안을 제정할 때, 개정할 때 살려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보여 줬던 이 이면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오히려 케이팝과 K-컬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사이에 정작 이것을 싹틔우고 꽃피우고 처음에 시작했던 초기에 케이팝의 원조들, K-드라마의 원조격인 방송사 또 CJ ENM이라든가 롯데엔터테인먼트라든가 우리나라의 제작사들, 우리나라의 OTT들, 기획사들 이런 회사들은 크게 대박 터진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그 수확을 크게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넷플릭스 같은 회사에 종속돼 가는 그런 현상을 역전시켜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출도 케이팝이라든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보듯이 이런 디지털 문화 콘텐츠가 점점 커져 감에 따라서 일자리도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삼기 위해서도……

보십시오. 국가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선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 핵심 부서였습니다. 반도체를 키우는 핵심 부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AI를 전략부서로, AI의 성장에 국가전략의 어떤 기본으로 지금 부총리 부처로 키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보듯이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한류를 뒷받침할 국내의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 진흥 부처 또 아주 예측 가능하고 경쟁력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규제 환경은 완전히 분산돼 있고 파편

화돼 있어서 전혀 이것에 도움을 못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빨리 인식해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케데헌 기록 계속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DVD 우편 배달·배송하는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팔아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팔아서, 전 세계의 구독자를 확 늘려서, 한국을 팔아서 성공한 미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만든 한국 기업들과 한국 콘텐츠 제작자·창작자들 또 방송사들, 기획자들 이 사람들의 설 자리는 그동안 우리 정부나 국회가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않아서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 종속될 상황에 처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모멘텀을 살려 나갈, 정말 2008년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발맞춰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을 때보다 훨씬 심도 깊고 훨씬 전략적인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달랑 몇 사람 데려와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현재 있는 방송통신위원장만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졸속적인 법안은 안 된다. 그보다는 진짜 본격적인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가 과방위뿐 아니라 문체위도 있고 또 어쩌면 정무위 또 OTT 분야는 국제통상 문제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산자위 외통위 이렇게 관련 상임위가 어우러져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송·미디어·통신의 거버넌스 재편과 진흥책 또 적절한 규제 환경 이런 것들을 정말 논의할 시점이다.

그리고 법만 해도 수없이 많은 법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법령 체제 그리고 예산 그것을 한꺼번에 논의해야 될 범국회적인 특별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대한민국 케이팝과 K-한류, K-웨이브, K-콘텐츠 창작자들·제작사들·기획사들 또 배급하는 OTT 이런 곳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무제한토론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법에서, 당초 이 법이 생각했을 그 엄청난 사명, 지금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추고 진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고 규제는 더욱더 투명하게 해서 성장을 북돋을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그리고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것을 더 크게 키우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진보언론도 걱정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이런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여기서 멈춰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벌써 민간에서는 이런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제2 케데헌은 우리 힘으로 만들자. 케데헌이 성공했다고 했는데, 케데헌 만든다고 넷플릭스에서 한 1200억 썼다고 합니다. 또 IP는 소니 픽처스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것 하나로 넷플릭스는 세계 구독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1조 원 이상의 큰 매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수확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없어서, 이 케데헌의 기적을 우리끼리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거버넌스를 새롭게 만들고 저것을 전략적인, 우리 국가적인 아이템으로 크게 키워 나가서 우리 젊은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지금 관세협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출에서도 여러 디지털 수출 능력을 높이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정말 범부처가 붙어서 논의를 하고 또 진흥을 위한 진흥 부처를, 독임제 부처 장관급 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체부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같이 묶어서 정말 강력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일단 오늘 법안은 멈추시고 연말이면 연말까지 해서 관련 상임위가 다 붙어서 또 국회의장께서 특별위원회를 만드셔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케데헌 모멘텀을 이어받고.

국내 창작자들·제작자들·기획자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케데헌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자’ 저렇게 직접 창작자들·기획자들이 또 배급하는 회사들이 나섰다면 우리 국회와 정부도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답은 하지 않고 전혀 저런 기대와 무관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실망과 분노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지금 케데헌 가지고 사람들이 열풍이 불고 환호했는데 알고 보니까 IP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소니가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인 수확은, 영업적 이익과 수익은 전부 넷플릭스로 가는 이 현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한류가 갈림길에 섰다. 한류가 지금 글로벌 OTT의 종속적인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KBS·MBC·SBS·JTBC, 다음에 CJ ENM·롯데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콘텐츠 제작사들이, 기획사들이 또 배급사들, 티빙이라든가 이런 국산 OTT들이 부흥하는 길로 설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법제와 정부조직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냐, 어떻게 규제 환경은 새롭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의 미래,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일을 저버리는 역사적인 큰 패착, 역사적인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때 만일 우리가 동시에 정보통신부를 만들어서 통신 환경을 키우고, 전화통신 환경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무선통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고속으로 인터넷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가면 이런 것 안 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통신 환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고 또 정보화도 엄청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2008년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을 맞아서 방통위를 일찌감치 만들었는데 이제는 더 속도가 빨라져서 지난 10년 사이에 OTT가 엄청나게 전진하는 마당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서는 미디어와의 큰 융합, 더 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런 논의, 10년 동안 꾸준히 속도를 높이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 속도를 맞추지 못함에 따라서 점점 그 차이가 커졌습니다.

한국경제 기사 보여 주시지요. 넷플릭스와 동시에 출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전부 우리나라 것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나라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대박 친 건 전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서 우리 한국에 처음 선 보이고 한국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정치 드라마인데 그것도 사실은 영국 BBC에서 했던 드라마를 가지고 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세계적인 OTT가 되지 못했는데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완전히 이제 기록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콘텐츠로, 우리나라 K-한류로 저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도 워낙 한류 콘텐츠가 좋았기 때문에 토종 OTT를 당시에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토종 OTT, 특히 왓챠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사채 490억을 상환하기 힘들어서 넘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며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답하는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안, 우리 방송통신 환경을 엄청나게 크게 키워 줄 수 있는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환희,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이어 가기 위한……

벌써 우리 국내 OTT와 광고형 무료 TV인 패스트 기업들이 함께 원팀으로 뭉쳐서 제2의 케데헌을 우리가 만들자, 넷플릭스와 견줄 경쟁력을 갖추자, 티빙과 웨이브와 삼성과 LG가 뜻을 모으고, 그래서 정부가 AI 더빙 같은 것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본격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방송·통신의 통합 거버넌스의 논의가 되겠고 그것을 위한 입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또 더 강화해야 되고 또 예산을 더 정교하게 지원해야겠지요.

K-드라마, K-무비를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한국 영화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한국 영화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7월 하순에 우리 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하 의원과 과방위 간사인 제가, 두 사람이서 한국영화관산업협회랑 이런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도 바쁜 시기이고 해서 일단은 우리 당의 정책조율 차원에서 한번 두 상임위 간사 간에 이렇게 해 봤는데 정말 심각했습니다. 뜻밖에 더 심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케데헌 덕분에 한국 영화도 조금 살아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영화산업 21년 만에 1억 관객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미 간의 무역협상에 따라서 서로 영화 시장을 개방하면서 할리우드의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당시 우리 영화인들이 반대하고 했지만 당시에 스크린 쿼터 같은 것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1000만 관객 영화가 막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0만 관객 영화가 계속 터지면서 그중의 하나는 제 친구 강제규가 만든 '쉬리'며 '은행나무 침대'며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한 해에 3억 5000만 명이 영화를 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관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지금 제가 사는 마산에—멀티플렉스이지요—극장이

있는 곳은 대부분 상권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수도권의 부도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개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 또 수도권의 부심에 사는 분들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롯데 콘서트홀 같은 데서 매일 큰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영화로 빈 필하모닉 같은 것도 중계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보통 멀티플렉스를 통해서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상권의 중심에 멀티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오륙 년 전에 한 해에 3억 5000만 명이 영화를 보러 다녔는데 지금은 1억밖에 안 다니면 우리 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3억 5000만 명이면 우리 국민이 5000만 명이니까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일곱 차례 영화를 보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 관객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1년에 두 차례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심 극장가 주변의 상점들에 사람들이 영화 보러 오면서 많이 와서, 계속 와서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 가고 책도 사 가고 또 옷도 사 가고 또 외식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전에 1년에 일곱 번씩 오니까 4인 가족 같은 경우면 얼마입니까? 사칠 이십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이 어려운 이유는 물론 경제 전체,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지출 성향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일자리도 많이 줄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기본적으로 극장에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저것도 우리 K-무비, K-드라마류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은 저렇게 대박을 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차피 극장은 OTT 때문에 한물간 것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차피 극장이야 다 사람들 못 가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것 전 세계적 현상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영화산업 매출이 한 절반 수준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사들이 2024년에는 전부 적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문화, 영화 또 미디어 콘텐츠, 케이팝, K-드라마,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뭔가 예산 재정으로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되고 있는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산업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11쪽 보실까요.

11쪽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관객 수가 줄었습니다. 다 줄 수밖에 없지요. 그 당시에 극장에 못 오게 했으니까 또는 거리두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끝난 뒤 2024년에 전 세계 극장 관람객을 보면, 박스오피스 현황을 보면요 우리나라만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한국만 거의 반 토막이 났고 프랑스는 거의 원상회복했습니다. 일본도 90%가 됐고 미국도 OTT의 나라인데도 75%, 거의 4분의 3 수준 회복됐습니다. 우리만 절반 수준, 반 토막 난 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회복률이 53%에 그칩니다. 호주도 80%, 전 세계는 90%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우리 K-드라마, K-무비의 원산이었던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다른 나라도 다 재

정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중국은 96%까지 회복됐고 미국도 75%, 일본은 90%, 프랑스도 95%, 영국도 80%, 독일도 93%까지 회복됐는데 왜 우리만 반 토막 났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제안을 한 건데 제안 속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제안, 펀드 보실까요. 지난해인데 지난해를 다 합쳐도 그 펀드가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은 800억밖에 안 됩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제작비용이 1200억인데 지금 1200억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45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억,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이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방송·통신에 또 문화 콘텐츠에 새로운 컨버전스와 새로운 거버넌스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재정 규모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영화산업 하나만 보더라도 영화산업이 반 토막 나서 왜인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 국가 지원도 그나마 부처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으니 그게 어떻게 집중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국회 조찬 토론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컨대 영화산업 특화 정책 펀드를 만드는데 이 펀드를 만들 때, 여기에 그런 펀드면 우리 부처가 관련되겠지요. 그런데 특히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막대한 자본의 글로벌 OTT의 제작 하청기지화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IP 주도권도 잃고 기업 경쟁력도 사라지고. 그래서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펀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를 지금처럼 문체부, 과기부 이렇게 나누어서 찔끔찔끔 주실 겁니까? 이걸 위해서도 큰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13페이지 보시지요.

영화산업이 또 OTT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산업과 우리 영화와 OTT를 어떻게 결합시켜 주느냐, 프랑스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연구를 우리는 제대로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OTT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사가 그 판권을 쥐고 영화사가 상영한 뒤에, 극장에서 얼마간 개봉한 뒤에 OTT로 가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정책적 믹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산업이 각자 알아서 혹은 규제만 첩첩이 쌓여서 발목이 묶여 있는 그런 환경을 방치했으니 어떻게 영화산업이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화산업이 자꾸 사라지면 앞으로는 잘나가던 감독, 영화배우들은 이제 넷플릭스의 프로덕션에 다 흡수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케데헌의 눈물은 더 크게 케데헌의 절망으로 커져 나갈 겁니다. 우리 콘텐츠, 우리가 키운 케이팝, 우리가 키운 K-드라마, 우리가 키운 K-무비, K-웨이브로 떼돈을 버는데 우리는 이것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키우지 못하고 그걸 종속기지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도 만들고 펀드를 어떻게 어느 부처가, 부처 간 이렇게 조금조금 쓸 게 아니라 집중화시키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미디어·방송·통신의 거버넌스, 즉 지금은 크

게 보자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문체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그걸 조금조금씩 나눠 갖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서로가 이걸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사라지는 상황이지요.

거기다가 규제는 또 곳곳에 많습니다. 칡넝쿨처럼 엉켜 있으면 어떻게 그걸 계속하겠습니까? 민간은 민간대로 활력을 높이고, KBS 같은 곳은 지금 시청료 2500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으니까 진짜로 뭔가 펀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가가 재정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KBS의 부동산 자산, 당장 국회 앞에 있는 연구동, 옛날에 국회의원회관 했던 것을 지금 KBS가 국가재산으로서 연구동을 갖고 있는데 그 KBS가 갖고 있는 국가관리재산 같은 것은 부동산 개발을 하게 해서 그 개발 수익은 몽땅 K-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한 칸막이 재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KBS가 어떤 때는 1000억 단위의 큰 대형 K-콘텐츠를 만들고 케이팝의 큰 대회도 만들고 하는 이런 투자가 없이는 이제 완전히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케데헌 쇼크에서 봤듯이 하청·종속기지로 될 것이라는 걱정이 너무너무 큽니다.

넷플릭스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넷플릭스가 아마도 미국에서 교포들 이야기 들어 보시거나 하면 항상 H마트…… 한아름 마트, 약칭 H마트지요. 요즘 미국에 가면 H마트가 또 뉴욕이고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 한류 덕분이지요.

H마트 옆에 가면 항상 옛날에 블록버스터 같은 이런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는데 그게 블록버스터고, 넷플릭스는 DVD가 나오면서 DVD는 얇으니까 DVD를 우편봉투에 넣어서 월 10달러, 월 15달러를 내면 한 번에 2개씩 빌려주던 이런 우편 대여 서비스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만에 스트리밍 서비스, 2007년 같으면 그때 유튜브가 막 활성화되던 시점이고 오바마 선거 캠페인에서 본격적으로 유튜브가 쓰이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넷플릭스가 지금과 같은 업종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처음 투자했던 게 2010년입니다. 2010~2013년입니다. 이때는 그 규모가, 투자 규모나 이런 게 우리나라 KBS나 MBC보다 더 크지 않았을 겁니다. CJ라든가 이런 데보다.

그런데 원래 영국 BBC의 프로그램을 리메이크한 ‘하우스 오브 카드’, 오리지널 콘텐츠를 투자해서 이게 시즌 1, 시즌 2로 해서 한꺼번에 쭉 다 보여 주는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대박을 터뜨리지요. 그런데 정작 더 큰 대박은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한동안 넷플릭스도 조금 시련이 있었는데 블록버스터라고 비디오 대여점 하던 그런 체인에서 넷플릭스를 비웃었다라는 기사가……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렇지만 결국 기술의 변화, 추세의 변화는 블록버스터가 오만하던, 한때 넷플릭스를 그대로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주해 있던 블록버스터는 쇠퇴하고 넷플릭스는 지금 세계를 장악한 미디어 최대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연도별 매출액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매출뿐 아니라 이게 엄청 급증

하고 있습니다.

18쪽 보실까요?

반면에 국내에 있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고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국내 OTT들, 티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 가입자 수도 많고.

여기 티빙이라든가 토종 OTT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 지금 이렇게 파편화돼 가지고 부처별로 찔끔찔끔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는, 종합적인 미디어 콘텐츠 전략, 방송·통신의 융합적인 전략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국가재정 규모가 일본·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랑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집중적인 전략적인 투자 결정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환경을 정말 잘 해 가지고, 이 부처 저 부처 또 저 위원회에서, 사방에서 오른쪽 팔목 왼쪽 팔목을 감고 뒷다리를 감는 이런 식의 규제 환경으로는 우리 국내 OTT나 국내 미디어·방송·통신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심야에 걸쳐서 자정 무렵부터 새벽 한 두세 시까지…… 이 미디어 정책, 미디어 거버넌스, 미디어·방송·통신의 거버넌스를 바꾸자는 논의는 꽤 되었습니다. 2022년에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걸 냈습니다. 그 주요 요지는 진흥은 하나의 정부부처 장관급 부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방통위·과기부·문체부로 나뉘어져 있는 미디어방송통신의 이런 진흥 부서들은 다 모아서 정말 미디어부를 하나 만들자, 미디어진흥부를 만들자 그런 논의가 여야 간에 거의 상당히 수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편으로 상당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그런 방식의 개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체 사라지고 그냥 방송통신위원회랑 똑같은 조직인데 과기부에서 몇몇 과만 옮겨 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바꾸고, 이건 지금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를 바라는 우리 창작자들 또 관련 산업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것 딱 하나는, 이게 부처가 변한 것도 아닌데 이름만 바꾸고 제정법이라고 해서 그것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봤더니 딱 그 부칙조항에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모조리 승계하는데 단 한 사람 정무직 공무원만 제외한다. 그래서 이 목적이 딱 드러난 겁니다. 이런 것을 처분적 입법이라 그럽니다. 소급입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직자의 공무담임권과 임기 보장,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해서 임기 보장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결정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미디어통신업계의 간절한 염원도 저버리고, 제가 밤을 새우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 3학회가 제안해 놓은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와 완전히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바꿔서 제척시키고 교체시키려고 하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상세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제정해서 위원장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장 임기도 내년 7월까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 정부는 다르다, 이 정부는 공무원의, 공직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했

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가 함께 임명할 수 있는 4명의 방송통신위원을 빨리 보임해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아울러서 방심위, 지금 방심위도 업무가 정지돼 가지고요 지금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조카들, 특히 젊은 여성이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디지털성착취물 같은 것을 차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수만 건이 쌓여 있습니다. 또 젊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벌써 중학생들까지도 요즘 도박과 마약에 빠져든다는데 그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심의하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빨리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 또 대통령이 충원해야 될 방통위원 또 방송심의위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부작위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이것부터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말까지 목표를 정하든 해서 그때 정말 방송·미디어·통신의 새로운 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보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시기 그렇게 안 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연말까지 하자든가 해서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정부도 특위를 만들고.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만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정부가 합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로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새로운 방송 융합 거버넌스의 위원을 새로 뽑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처분적 입법 같은 그런 위헌 소송은, 위헌의 소지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잠깐만 오셨나……

의원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대요」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기록을 세워 봐야 의미도 없고, 내가 한 6시까지는 하려 그랬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 사람은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지루해 할까 봐 차라리 신선한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법이 아니라 좀 더 전격적이고 좀 더 융합적인 그런 미디어 거버넌스가, 방송·통신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지금 이 법은 오히려 처분적 입법이라 그래서 소급 입법과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이 법의 논의는 중단하고 대신에 지금 빨리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복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복원해서 당장 민생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소를 하자. 그리고 지금 통신사 해킹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를 모범적으로 복원하는 걸 바탕으로 더 완벽한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 이렇게 호소드렸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최형두 의원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주희)

(05시28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이주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OTT와 유튜브,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시작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서서 향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을 미래 지향적으로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임말로 방미통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미통위법을 통한 미디어 거버넌스의 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좌절과 부침이 계속되었던 언론개혁의 역사를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찬성토론은 우선 언론개혁의 역사를 상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시각각 변해 온 미디어 환경에 역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 부침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이후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디지털 규제법안의 동향을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한 역대 정권들은 각종 방식으로, 즉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비합법적 물리력을 이용해 인권을 탄압했고 언론은 이 시기 인권 탄압을 조장하거나 최소한 알고도 방조하며 안타깝게도 권언유착의 한 틀을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 이 같은 권언유착에 동의할 수 없었던 언론인들의 많은 희생이 강요되기도 했습니다. 1951년 동아일보 필화 사건을 시작으로 80년대 동아투위, 정권의 검열에 반대한 제작 거부 투쟁, 87년 민주항쟁 등을 통해 우리 언론은 현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 과거사 중에는 아직도 명쾌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방 이후 언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순서대로 모아온 기사를 통해서 주요한 사건들을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1951년 동아일보 필화 사건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에 사형이 확정된 부사령관 윤익헌의 구명운동을 위해 방위군 정훈공작원 김대운이라는 사람이 윤익헌의 처로부터 거금을 받아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한 미국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경찰 조서가 국회에 보고된 것에 대해 미국 무초 대사가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는 기사 이것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공보처는 정정기사 게재를 요구하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편집

인과 취재기자 2인을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 필화 사건입니다. 조선일보 부산분실에서 4명의 장관이 사임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속보판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곧 잘못을 알아 신문에는 게재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조선일보 주필이며 부산분실 책임자였던 홍종인을 구속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일보 오식 사건입니다. '고위층 재가 대기 중 한미 석유협정 초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괴뢰휴전 위반을 미 중대시'라는 기사를 위해 채자해 두었던 활자를 식자하는 과정에서 괴뢰 고위층이라는 오식이 발생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동아일보가 먼저 발견하고 배포를 막았으나 몇백 부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이것들을 회수하는 한편 이 사실을 종로서, 내무부, 공보실 등에 자진하여 통보하였으나 정부는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동아일보에 무기 정간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 정·폐간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권 아래 자행된 언론 탄압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경향신문 정·폐간 사건이었습니다. 경향신문 정·폐간 사건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승만 정권이 집권 말기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향신문은 이승만의 강력한 정적인 장면 부통령을 지지하는 천주교계의 신문이었으며, 둘째 폐간을 위해 적용한 법률이 미군정 법령 88호였으며, 셋째 서울고법에서 행정처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얻은 복간의 기회를 자유당 정권은 같은 날짜로 무기 정간 처분을 하여 경향신문의 활동을 무조건 억제하려 했다는 점 등입니다.

정부는 경향신문에 대해 1959년 1월 11일 자로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라는 사설, 2월 4일에는 여적란에 실린 '다수의 횡포'라는 칼럼, 사회면에 실렸던 '사단장이 기름 팔아먹고'라는 기사, 이승만 대통령의 기자회견 기사 중 오보, '간첩 하모 체포' 기사로 인한 간첩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이 모두 다 정부의 주장입니다—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때 사용한 법률이 미군정이 종식되었음에도 그때 제정한 88호, 허가제를 규정한 규정인데요. 이 88호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면 당연히 자동 무효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정법상 살아 있다는 이유로 적용한 것이었고 이에 경향신문이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서울고법에서 6월 26일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기 정간 처분으로 다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4·19 의거 이후에야 복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문은 물론 언론인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해직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경향신문만이 아니라 폐간 내지는 정간 처분당한 일간신문과 통신은 10여 개에 달했는데 이들은 모두 광무신문지법과 미군정법령 88호에 의거해 이루어진 것들로 사실상 위헌적 행위에 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공화국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여러 건의 언론탄압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선 민족일보 사건입니다.

진보적 언론을 표방했던 민족일보는 5·16 직후인 5월 19일 폐간되었으며 관련자 1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중 발행인 조용수와 더불어 송지영·안신규에게 사형을, 이종률·이상두에게는 징역 10년, 양수정·이건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족일보의 주장은 정권이 발표한 것처럼 북한과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집권 세력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일보를 용공으로 몰아 발행인 조용수를 사형시켰습니다. 이는 민족일보가 당시로서는 혁신 세력들이 모인 곳이었고 쿠데타 정권은 혁신 세력을 제거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혁명재판부가 용공의 의미로 예시한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민족적 자생적 노력으로써 남북협상의 단계에까지 정세를 발전시키라', 1961년 5월 16일 자입니다. '범민족적인 통일 민족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날짜입니다. 5월 12일 자로 '우선 체육 교류부터라도 시작하자', 5월 9일 자로 '모처럼 찾은 통일외교의 이니시아팁을 뺏기지 말자', 5월 5일 자로 '남북학생회담 갖게 하라', 4월 10일 자로 '이북 쌀, 이남 전기, 젊은 사자들의 침묵된 데모' 등 통일과 관련된 주장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내용은 평화통일과 남북 교류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용공의 성격을 전혀 지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영희 기자 사건입니다.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영희 기자 사건은 조선일보 외신부에 근무하던 이영희 기자가 쓴 1964년 11월 21일 '유엔의 한국 문제 토의에 있어서의 중립국의 동향'이라는 기사를 빌미로 이영희 기자와 선우휘 편집국장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당시 유엔총회에서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랍공화국, 알제리, 캄보디아, 말리 등이 남북한 동시 가입안을 정식의제로 제출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제출되면 남한 단독 가입 문제가 의제로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외신을 참고한 것으로 사실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가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고 유엔 동시 가입 논의를 터부시하던 상황에서 이영희 기자의 기사가 문제 된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정부의 통일 논의를 벗어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고 용어 자체도 통용되는 것을 막았던 사상 탄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송아지 사건입니다.

1965년 대전방송국에서 방송된 방송극 '송아지'는 그 작가인 편집부장 김정욱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케 했습니다. 방송극의 내용은 농촌에서 금 같은 송아지의 값이 육칠만 원 하는데 이 돈이 도시에서는 하루 술값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도시 처녀와 농촌 소녀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세태를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대립 관계로 보고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모순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특정계급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집필했다고 볼 수 없고 도시 처녀의 전후파적인 기질을 규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오적 사건입니다.

오적 사건은 유신을 앞둔 3공화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었

습니다. 김지하는 ‘오적’이라는 시를 ‘사상계’ 1970년 5월호에 실었습니다. 이를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이 전재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전선’ 주간 김용성, 편집위원 손주항, 사상계 발행인 부완혁, 기자 김승균 등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유명 문인들은 시의 풍자성을 칭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1972년 12월 20일 이 오적이 특권층을 응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그 빙자의 도가 지나쳐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담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계급의식을 조성, 북한의 선전 자료에 이용되었으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시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형사지법의 판결은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도 북한에 이로우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서 결과범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억제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다음, ‘다리’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리’지에 1970년 11월호에 게재된 임중빈의 논문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이 국외공산계열인 전시 꽁방디 등 극좌파를 비롯한 미국의 뉴레프트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함으로써 동 국외공산계열 및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했다고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의 두 사건과 달리 재판부는 논문이 공산계열이라고 불릴 수 없는 꽁방디나 뉴레프트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이질적인 것을 연구하고 발표할 자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신정권 치하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아·조선 기자 해직 사건이 있지요. 당시 언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1975년 동아일보에서는 163명이 해직되고 이 중 134명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언론민주화 운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동아일보 구성원만 해직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33명의 기자가 해직당하고 1명이 재입사해서 결국 32명이 조선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언론민주화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언론민주화 투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유신정권의 폭압적인 통제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신문들에 대한 일반인, 특히 대학생들의 분노가 존재합니다.

‘언제부터 언론은 그렇게 백성의 권익에 등져서 지배계급에 아부하는 아첨배가 되고 말았던가? 아첨으로 배를 불리며 백성의 내일을 장사 지내려는 상여꾼들이여 가라! 한가하고 유복한 장사치, 지배계급의 충실한 호위병들이여 가라! 저 골고다의 계곡으로 사라져 가라. 무기력한 필봉은 무기력한 백성을, 마취당한 필봉은 마취당한 백성을 만들 뿐이 아니냐? 우리는 언론마저 좌절당하고 무력화해 버리고 또는 아첨해 버리는 그런 오늘의 한국 현실을 통곡한다’, 바로 고대생들이 채택한 공개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이여! 그 무기력과 나태를 박차고 일어나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리는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민주헌정수호투쟁에 과감히 참여하라. 우리는 외로운 투혼을 외롭게 하

지 말아 달라는 것을 벅차오르는 기대와 뜨거운 열망으로 한국 언론계에 호소하고 싶다', 당시 연대생들이 채택한 메시지였습니다.

1971년 3월 26일에는 서울대학교 문리대·법대·상대의 학생회장단 10여 명이 '언론인에게 보내는 공개장', '언론화형선언문', '언론인에게 고한다'는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를 낭독하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언론은 공정해야 하며 어느 특정인을 위해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신문은 언론인이 내는 신문인가, 상인이 내는 신문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듣건대 일선 기자들의 고생스러운 취재는 부차장 선에서 잘리기 일쑤요. 힘들게 부차장 선을 벗어나면 국장 선에서 난도질당한다니 이 무슨 해괴한 굿거리인가.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 특히 자주적인 편집을 방해하는 기관원을 신문사에서 축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 이미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언론사에 대한 정권의 통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원 출입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언론화형식을 거행하면서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표하자 이에 이미 기사가 검열되고 있음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던 동아일보 기자들이 1972년에 이어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바로 이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서울 소재 신문·방송들은 물론 각 지역 신문·방송들에게까지 번져 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광고탄압이라는 형태로 대응했습니다. 이미 기업화한 언론으로서, 광고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진 신문으로서는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선언이 있은 지 두 달이 채 못 된 1974년 12월 24일 광고주 20여 개사가 한꺼번에 광고의 해약을 통고해 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광고탄압은 유신정권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지요. 이는 박정희로부터 동아일보를 혼내 주라는 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계획됐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광고국장 김인호는 주거래 광고 기업체 간부들과 했던 면담에서 광고탄압이 중앙정보부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오던 대기업, 극장 등 대 광고주의 사장과 광고 담당 간부들을 불러놓고 '왜 동아일보에만 광고를 내느냐. 앞으로 동아일보에 계속 광고를 내면 곤란하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광고탄압은 1975년 3월 17일 동아일보 기자, 피디, 직원들이 강제 축출되고 난 후 일정한 정지작업 기간을 거쳐 7월 16일을 기해 광고계약 해약 사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 문제로 해고된 2명의 복직 문제가 풀리지 않자 농성 투쟁을 전개했고 전술한 바와 같이 33명의 기자들이 해고, 축출된 이후에야 잠잠해졌습니다.

동아일보의 광고 해약 사태를 본 독자들은 주머니 돈을 모아 격려 광고를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신문사의 규모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때 정부의 경제적 통제가 미미한 정도밖에 영향을 못 준 반면 동아일보 광고 해약 사태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진 것과 더불어 조직 생존의 목표가 언론 사명 달성에 우선하는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의 광고가 들어올 때 매우 투쟁에 호의적이었던 경영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영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쟁을 종식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언론자유수호투쟁은 노동운동의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는 한국일보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도 1974년 12월 10일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

다. 물론 전국출판노조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창숙 기자를 지부장으로 하는 임원 9명을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정하는 등 준비를 해서 서울시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한국일보도 이에 대해 이창숙 기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응대했습니다. 문제는 이창숙 기자에 대한 해임을 노조 설립 하루 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독재정권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사용했던 통제 수단은 바로 언론 통폐합을 통해 친정부 언론 속에서 반정부 언론을 솎아낸 것이었고 남아 있는 언론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 통폐합에 대해서 이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80년대 언론 통폐합은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이었지만 1970년대 통폐합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당성이 부족한 유신정권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발은 당연했고 이를 옮기는 언론에 대해 유신정권이 불편해했을 것도 당연합니다.

그 실태를 보면 우선 1972년에는 대구일보와 대구경제일보가 자진 폐간 형식으로 문을 닫았고 이어서 지방지의 통폐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들어서는 한국경제일보, 동화통신, 대한일보 등이 차례로 폐간했습니다. 이는 중앙지의 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견상 명분은 자진 폐간 형식을 모두 띠었습니다.

더 문제는 지방지의 통폐합 과정입니다. 정부는 1도 1사 원칙이라는 주장을 앞세워서 언론사 통폐합을 유도해 나갔습니다. 대전에서는 대전일보가 중도일보를 합병하여 충남일보로 제호를 바꿨고 6월 1일에는 전북의 전북일보와 전북매일, 호남일보가 통합해 전북신문을 발족했습니다. 9월 1일에는 경기일보와 경기매일, 연합신문이 경기신문으로 통합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역 독점체제를 구축해 주고 비판을 무디게 하는 정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기일보와 경기매일, 연합신문이 경기신문으로 통합하는 과정은 당시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명백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1위 신문이 주도하는 통합이 예상되지만 사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호신문이 1988년 회고한 바에 따르면 수원에 기반을 두었던 연합신문의 홍대건 씨가 강력한 여권을 등에 업고 거대한 사옥과 시설을 갖춘 인천의 두 일간지를 흡수하여 연합신문이 주도하는 경기신문을 경기도의 단 하나의 일간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인천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은 없어졌습니다. 경기일보의 경영진과 기자들은 10년, 20년, 수십 년간 몸을 담았던 직장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후 신군부에 의한 지방지 통합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1위 신문이 아닌 사람에게 통합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그 혜택에 대한 보답을 친정부적 성향으로 기사를 통해 보여 줄 것을 기대하고 이루어진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신문들 중 자진 폐간한 경우에는 세인들을 호도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대구일보의 경우 프레스카드제의 발급을 계기로 기자들로부터 금품을 거두어들인 사건이 있었고 대한일보의 경우 사장이 수재의연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3대 통신사의 하나인 동화통신의 폐간이나 피처(feature) 독점기사를 내보내던 AK통신이 없어진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통폐합의 결과 1도 1사 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걸쳐 많은 지방지가 사라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충남·전북·경기 지방에는 1개씩의 일간지만 남았고 원래 1개씩의 일간지만 존재하던 강원과 충북, 제주 지방을 제외하면 부산·경북·경남·전남 지방에서만은 2개씩의 일간지가 발행되어 1도 1사 주의가 거의 이루어졌고 단 14개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언론정책의 결과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당시 윤주영 문공부 장관의 발언이 의미가 있습니다. 장관은 국회 문공위원회 석상에서 '사원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경영부실의 지방지 통합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언론기관이 언론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통합 또는 증자를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정책으로 프레스카드제의 도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카드제의 도입은 명분상으로는 사이비 언론을 줄이고 기자 임금의 현실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세웠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서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되고 기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기자협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등 압력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각 언론사에 임금 현실화를 실행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러한 기자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1970년의 차관 도입에 의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국 신문산업은 경영합리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신문산업은 국가에서 실시한 프레스카드 발급을 기회로 1971년과 1972년 사이에 전체 기자의 38%에 해당하는 1920명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국가의 언론통제 수단인 프레스카드 발급은 한국 신문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신문기자의 자격, 취재의 자격을 정부가 마음대로 좌우한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중대하고도 심각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화 과정을 통해 순치된 발행인들은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한 채 1971년 12월 17일 언론자율에 관한 결정 사항을 채택하여 자진해서 결의하는 형식으로 이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

프레스카드제의 발급은 1973년 3월 7일 행정부 각처의 기자실을 줄이고 출입기자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입기자대책이라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노동 조건의 취약성에 기반했습니다. 당시 언론사들의 취업규칙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 신문사는 회사 형편에 따라 노동자를 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간섭은 기자들의 자율적인 발행물인 기자협회보까지 이어졌습니다. 1973년 7월 4일에는 그동안 주간으로 발행해 온 기자협회보를 문공부가 월간으로 발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회보는 1964년 11월 10일 월간으로 창간했으나 1968년 8월 3일 이후 주간으로 발행했는데 이를 환원조치한 것입니다. 기존의 일간지의 경우 사주, 발행인의 협조 아래 일정한 통제가 가능했지만 기자들의 자율조직인 기자협회까지 압력을 넣기는 곤란했으므로 아예 발언할 매체 자체의 발행주기를 길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유신정권이 10·26 사태로 무너지면서 각계의 민주화 요구가 거셌지만 이것은 신군부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신군부의 집권 과정은 5·16 정권과 달리 많은 국민의

희생을 요구했고 유신 시절 만들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당성 확보와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언론의 통제가 당연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체제 재생산의 한 방식으로 언론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5공화국 시절 언론에 대한 통제는 그 필요성의 크기만큼 아주 다양한 방식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강제 언론인 해직과 언론 통폐합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건들입니다.

둘째는 사실상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유관기구의 설립입니다. 언론인 해직과 언론 통폐합은 신군부가 추진한 것이었지만 이 신군부에만 주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군부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언론을 정비하려는 의도와 기업화한 언론이 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결합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당시 언론인 해직기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헌들도 이를 서로 다르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신군부가 요구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수가 해직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 경영진은 신군부에 대항해서 언론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의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 통폐합은 언론 구조의 전면적 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구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시설기준 조항을 유지하며 발행인의 결격사유, 등록 취소 조항을 강화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로서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단행한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서는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화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 과거의 사건들이 옳지 못했다는 그런 결정이 진화위를 통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자료, 2010년 1월 7일 자로 보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 장악 위해 언론 통폐합. 64개 언론사, 18개로 강제 통폐합.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언론인 강제해직도’.

보도자료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당시 이영조 위원장이셨습니다—(진화위)는 1980년 11월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가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언론사로 강제 통폐합되었고 172종의 정기간행물이 폐간되었으며 1000여 명 이상의 언론인이 해직된 이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다음, 조사 경위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과 관련된 신청사건 6건을 포함하여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

단해 2007년 11월 20일 직권조사 사건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조사를 위해 관련 기록 총 4만 5000여 쪽을 입수해 검토·분석하였으며 29개 언론사로부터—조사 당시의 기준입니다—약 4000여 쪽의 서면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통폐합 대상 언론사 및 실무자, 해직기자, 보안사 수집관 및 수사관 등 참고인 총 152명에 대해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화위에서 이렇게 진실규명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개시 결정을 진행합니다. 이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그때부터 조사권한이 생겨서 진화위 담당자들이, 조사관들이 조사를 개시하게 되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화위 상임위 등 의결기구에서 진실규명 결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조사 경위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무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3~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152명에 이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문헌자료들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결과입니다.

'1번 언론사 통폐합.

1980년 1월경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가 집권하는 방안을 검토한데 이어 3월경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통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언론인 해직, 정기간행물 폐간,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하였는데 이러한 신군부의 조치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 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통폐합 대상 언론사 선정은 1980년 4월경부터 언론사주 및 소속 종사원에 대한 동향 파악을 시작으로 친정부 성향 여부,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관계 여부, 언론사별 비리에 대한 조사와 신군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안사 문서자료, 언론사 및 보안사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보안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세청과 감사원을 통한 세무사찰 및 경영감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언론사도 보안사 수집관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보안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경영상 위해가 갈 것임을 고지받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보안사는 계엄하라는 비상상황을 이용해 보안사나 지역 보안대 사무실로 언론사 사주들을 소환한 뒤 포기각서를 징구했으며 언론사 대표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총무부장 등에게 대리로 각서를 작성케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 소속 군인들은 권총 등을 휴대하거나 착검해 언론사 사주들에게 위압을 가했으며 각서 제출 거부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언론사의 수뇌진을 교체하면서 DBS—동아방송이지요. 당시 동아일보 계열입니다—TBC—역시 당시 중앙일보 계열입니다—대구한국FM, 전일방송, 서해방송을 KBS로 통합하였고 CBS에 대해서는 보도·광고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편 대한교육보험—현재 교보생명입니다—그리고 고려화재—당시 쌍용화재입니다—등

기업들이 소유한 문화방송 주식 70%는 문화공보부에 기부채납된 뒤 재무부를 거쳐 KBS에 현물출자되었고 마산 문화방송, 울산 문화방송, 삼척 문화방송, 춘천 문화방송의 주식은 부정 축재 재산으로 농림부에 환수 조치된 후 문화방송이 100%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단일체제로 묶어 통제하였다.

신문사는 7개의 종합일간지 중 신아일보가 경향신문에 통폐합됨으로써 6개 지로 개편됐고 석간이었던 서울신문이 조간으로 바뀜으로써 조·석간 각 3개의 지로 재편성되었다. 경제지는 4개사—서울경제, 내외경제, 매일경제, 현대경제입니다—중 서울경제와 내외경제가 각각 한국일보와 코리아헤럴드로 통폐합되어 2개의 경제지로 재편성되었다.

통신사의 경우 시사통신, 경제통신, 산업통신 등을 해산하는 한편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을 통합하여 사실상 정부가 소유하는 단일 통신사—즉 연합통신입니다—를 만들고 기타 언론사의 주재기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통제가 용이한 하나의 취재원에서 기사가 공급되게 하였다.

지방지는 1도 1사 방침에 따라 대구·경북의 영남일보는 매일신문으로, 부산·경남의 국제신문은 부산일보로, 경남일보는 경남매일로 각각 흡수되었고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이 통합되는 등 14개 신문사가 10개의 신문사로 재편성되었다.

지방지 통폐합은 보안사 언론대책반에서 1980년 4월경부터 각 지방 언론 사주들의 비리 행위 등을 조사한 후 통폐합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 보안사 지역 부대별로 집행되었다. 지방지 통폐합은 신군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형식적인 결재조차 받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집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사와 개인의 재산을 환수, 기부채납하게 하였다. 기자재 가격만으로 통폐합한다는 계획하에 언론사에는 사전에 정한 인수액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통폐합이 언론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처럼 홍보해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은폐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에 대한 결정입니다.

'신군부는 당시 법률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해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신군부는 당시 정기간행물들이 외설·부조리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정화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는 없었다.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들을 외설·부조리하다는 불명예와 함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도 입혔다'.

세 번째로 언론인 강제해직에 대한 결정입니다.

'신군부는 체제에 순응하는 언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보기관의 자료와 보안사 요원들의 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언론계의 저항 세력을 30%로 규정한 뒤 이들을 해직하도록 언론사에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인 해직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자율 결의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안사가 신군부에 비판적인 언론계 인사들을 선정해 명단을 작성, 이를 언론사에 전달하여 해직케 하였다. 당시 언론사는 보안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정 비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직 대상자를 선정한 후 부조리나 무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인을 해직시켰다.

신군부는 해직된 언론인 가운데 일부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해직 이후에도 취업

을 제한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으며 해직된 언론인들은 취업이 불허된 상태에서 부조리·무능력한 사람으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가정 파탄, 생계 곤란, 불명예 등의 고통을 당했다'.

지금 삼청교육대 이야기가 나와서 권고 조치를 읽기 전에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이 국회에 들어온 지 현재 만 두 달이 되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삼청교육대 사건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억울하게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트라우마, 교육대에 입소해서 받은 온갖 폭행과 폭력적인 그 가혹행위들을 지금도 악몽을 꾸면서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이 겪었던 트라우마와 상처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나 이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국민에 대한 우리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이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그 사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등의 전향적인 결정에 의해서 항소 포기 또는 상고 포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분들이 국가 스스로가 이런 사법적인 절차 과정에서 스스로 이런 절차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상처를 위로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진실규명 결정 권고조치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앞서 쭉 낭독해 드렸던 진실규명 결정, 사실관계들을 보면 정말 과거 독재정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언론인들, 언론사를 탄압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해직을 당했던 그 당시 기자들, 앞서 언급드렸던 삼청교육대 피해자 못지않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고 조치입니다.

'국가는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 및 언론인 강제 해직, 정기간행물 및 출판사의 등록취소 조치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1980년을 시작으로 해서 5공화국 시절은 정말 언론탄압이 가장 극악했던 시기였지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기자협회보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실상을 한번 엿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5공화국 시절은 언론탄압이 가장 극악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노태우·김영삼 정권 때는 일종의 해빙기가 일부나마 되었습니다. 민주화에 따라 통치자의 권력은 약화된 반면 언론의 힘은 커졌습니다. 역설적으로 민주화를 이끈 김대중 정권 이후 언론과 권력의 갈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우선 5공화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론통제는 5공화국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신군부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1980년 말 언론통폐합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들이 있지요. 전국 일간지는 28개에서 17개로 줄었고 7개였던 통신사는 연합통신 1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리

고 전국 29개 방송사 가운데 TBC 등 6개사가 KBS에 흡수되었고 MBC 지방 제휴사들은 계열사화되었고 또 5·16장학회—지금 정수장학회지요—지분을 제외한 MBC의 민간 주식이 모두 정부에 헌납되었습니다.

기자협회보를 비롯한 정기간행물 172종이 폐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000여 명의 언론인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보안사 언론인대책반은 언론인 해직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933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전국 1900여 명의 언론인을 새마을연수원에 입소시켜 2박 3일 동안 군사적 집단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 12월 26일에는 3개의 언론관계법을 통합해 언론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으로 문공부장관은 언론사의 정·폐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공 정권은 문공부 아래에 홍보조정실을 두고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청와대의 지휘 아래 홍보조정실은 매일 언론사에 그날 지면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1986년 9월 '말'지가 폭로하였는데 언론기본법과 문공부, 홍보조정실 프레스카드제는 1987년 6·29 선언 이후에야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 한겨레신문, 국민일보가 창간이 되고 신문의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론통제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사이비기자 단속을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프레스카드제의 부활을 검토했습니다. 1988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문공위 소속 의원들은 언론인 개별 접촉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12월 13일 자에 보도했습니다. 문공부 홍보조정실이 폐지되고 신설된 홍보정책실은 언론사별 접촉 대상자를 선정해 보도 협조 요청 사항을 알려 주고 사내 동정을 입수해 보고서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민주화 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언론과 정부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언론사 세무조사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곧이어 2월 24개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두고 당시 한나라당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보수지들은 정당성 없는 언론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여론조사 결과 언론사 일선 기자 75.4%와 국민 63.1%는 세무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에는 국세청이 일선 신문사 차장대우 이상 기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해 갔다는 주장이 나와서 조선일보·중앙일보 노동조합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아주 상세하게 언론개혁 내지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개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지금은 좀 간략하게 조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정부에 앞서서 김영삼 정부도 1994년 2월 10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무렵인 2001년 2월 도쿄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94

년 세무조사 당시 사주들의 비리를 대거 포착했으나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요.

세무조사에 이어 신문고시가 부활되자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신문은 계획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정권 초기인 1998년 청와대 비서실 출입 봉쇄가 또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백악관식 브리핑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때 청와대의 기자단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봉쇄 조치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로 국민의 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권에서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하루 두 차례 비서실을 개방하기로 절충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언론대책 문건 시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1998년 1월 정권 인수위 때 작성된 새 정부 언론정책 추진계획은 방송을 정권 협조적으로 만들어서 비판적인 신문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99년 10월에는 한나라당이 '성공적 개혁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문건을 폭로했는데 여기에는 조중동 등 주요 신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주의 사법 처리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시사저널도 2001년 10개 일간지를 반여지, 중립지, 친여지로 나누어 반여지 관리 대책을 다룬 세 종류의 정부 언론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2002년에는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전 상임이사 집에서 발견된 이수동 문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개혁이 시급하며 시민단체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뼈대였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없어진 공보처와 비교되는 국정홍보처는 1999년 5월에 신설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프레스카드제도 실시와 기자실 축소 등 역대 정권의 언론통제 정책을 노무현 정권의 취재 선진화 방안과 비교하면서 언론탄압이라고 그 이후에도 규정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책이라고 해서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무시하고 비교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당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외대 정진석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권의 조치를 언론통제라고 규정할 수는 있으나 정치·경제·언론 환경이 급변한 지금 과거 정권의 정책과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독재정권의 탄압에 견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현 정부의 언론관과 정책이 시대에 역행, 퇴행적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권력이 축소되는 대통령 등 통치자들과 이를 견제하려는 언론 등 대의기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대 미국 백악관의 언론 관계를 다룬 책 '대통령과 언론, 친구인가 적인가'를 편역했던 경향신문 설원태 선임기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민주화된 선진국의 권력자도 언론이 자기를 우호적으로 보도해 주기를 당연히 원하며 이를 위해 갖가지 언론 정책을 내놓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언론과 정권의 갈등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언론개혁의 역사가 흘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독재정권과 이후 우리 민주화 정권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영향력 그리고 자유, 기본권이 좀 신장되어 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 논문은 ‘한국 방송 8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논문인데요. 강대인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기고한 논문입니다. 이 기고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대중 정부에서 언론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굉장히 상세한 분량으로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급하게 찬성토론을 준비하게 되면서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 상세하게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언론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기존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 3월 발표된 대통령 자문 방송개혁위원회의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는 우리 방송의 지난 과오와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방송의 지향과 개혁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부터는 제가 하다체로 그대로 논문을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방송계의 많은 문제는 과거 잘못된 방송 정책의 결과로 야기된 측면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 방송이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은 방송 역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록 우리 방송은 80년 동안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크게 바뀌어 왔지만 방송의 내면과 규제의 틀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가 주는 교훈은 클 수밖에 없다.

방송개혁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큰 틀과 이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새로운 방송 방향과 정책목표를 제시할 것을 권면한다. 보고서가 나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 유효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방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원칙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규범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철저하게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어 당시의 지적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제시해 본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 방송 80년의 회고와 전망’ 이 글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언론개혁 과제들을 수행해 가면서 언론과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발표한 방송개혁 보고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주요한 부분들을 저자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인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송에 대한 철학과 이념 부재. 방송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역할에 대한 기본 철학과 이념 부재, 방송정책의 근간이 될 기본 원칙과 비전 부재, 방송매체별·플랫폼별·채널별 위상과 역할의 차별화 부재.

두 번째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재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 정치권력의 직간접적 방송 경영과 편성 내용 개입, 방송사와 방송인의 순응적 풍토 및 불공정한 편파 방송, 방송계의 전문성과 윤리성 부족.

세 번째로 방송정책 결정 과정의 종합성·일관성·투명성 부재를 언급합니다. 방송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부처 간 공조 부족으로 정책의 합일성과 일관성 부

재, 장기적·종합적 정책 수립보다는 단기적·단편적 방송정책 의존.

네 번째로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공공성과 품질 확보 실패입니다. 시청률 경쟁과 오락 프로그램 위주의 상업주의 편향, 방송사 조직 운영 및 제작 분야의 경영합리화 노력 미흡, 플랫폼 간·매체 간·채널 간 차별화 노력 미흡.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방송산업정책의 실패. 시장 여건 고려 없이 방송정책을 추진, 방송시장 피폐화 초래, 방송산업 활성화·시장 자유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력 부족, 글로벌화에 대비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미흡, 방송·통신의 융합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부족.

이런 내용들이 지난 시기 우리 방송정책에서 문제로 지적이 되었다고 당시에 평가를 하면서 '이와 같은 분석 평가·반성이 당시에 방송이 직면하고 있는 방송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처럼 그 인식이 정확하고 적절하다. 이런 문제 인식이 일과성 지적이나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아서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제하 방송, 미군정하 방송,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방송, 5·16 이후 군사정부하의 방송,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의 방송 등 80년의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방송의 제도적 문제점들이 변종으로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디지털 확산과 기술 발전에 의한 방송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점들까지 등장하였다. 문제는 이들을 바로잡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 전면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는 80년 회고와 반성을 계기로 해서 문제점을 한번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요구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 한국 방송의 영향 요인으로 꼽은 것들부터 한번 낭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권력과 방송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도적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예외 없이 정치 지배 형태의 변화, 즉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변화 시기였다. 우리 방송은 다른 요인보다 정치권력의 영향을 주고받았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처럼 방송을 문화매체나 정보매체 또는 오락매체로 인식하기보다 정권 홍보매체 또는 선전매체 구실을 해 왔다는 인식과 그런 역사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일제하의 방송이 일본 군국주의체제나 식민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구로, 미군정하의 방송이 미국의 자유주의 시장원리를 따르기보다는 미군의 점령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방송 역시 정부의 홍보 및 선전매체로서의 기능 확대를 위하여 그리고 5·16 이후 몇 차례의 정변 시기에도 방송은 정권 안위를 위한 주요 매체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특히 박정희 정권에서는 신문매체의 축소정책과는 달리 대폭적인 방송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방송을 통해 정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방송을 위치시킴으로써 방송은 조국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이나 국가 현실을 계몽하는 역할을 강요받았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각종 법적 통제 및 긴급조치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유신헌법 제50조에 따라 1970년대에 아홉 번의

긴급조치가 발동되었으며 그 가운데 직접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약한 것은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였다. 긴급조치 1호와 2호는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했으며 위반자를 심판하는 비상군법회의까지 설치하였다.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죄까지 규정하여 유신헌법에 관한 개정 논의를 완전히 봉쇄하였다.

따라서 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의 비판 기능이 불가능해지면서 관제언론의 틀 속에 놓인다. 법적·공식적 통제와 달리 이 시기의 비공식적 언론통제 형태는 기자들의 임의연행, 기관원의 언론기관 상주, 협조 요청, 발행인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 및 편집인과 기자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광고 규제 등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정화라는 형식을 빌린 타율적 통제는 1974년 5월 정부의 영향을 받아 그해 5월 23일 방송협회가 자율적으로 방송정화와 언론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결의까지 하기에 이른다.

당시에 방송협회가 밝힌 방송정화 방침은 국가안보 위주의 방송편성 지향,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방송의 선도적 역할, 국민 상호 간에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진작시킨다는 편성 방침하에 국론분열, 주체성 저해, 경제질서나 노사분규의 유발, 전통적인 사관의 예고, 퇴폐 풍조의 조장 등의 금지조항을 설치하는 것 등이었다.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과 영향력 확대는 전두환 정권에서 더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언론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고 할 조치들이 잇따라 일어난 1980년 이후 정치권력의 방송 개입은 그 절정을 이룬다.

아까 살펴봤던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80년 7월부터 실시된 언론인 강제해직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축출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겉으로는 사이비 언론인과 부정부패 연루자의 정리라는 명분을 세워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목을 받은 언론인 외에도 언론경영주의 눈에 벗어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언론인 강제해직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은 신군부와 언론자본의 합작품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인 강제해직에 이어 1980년 11월에는 언론 통폐합 조치가 발표되었다.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의 자율정화 형식을 빌린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결의문은, 첫째 언론기관의 난립 등 전근대적 언론구조의 개선, 둘째 상업방송체제의 공영방송체제로의 전환, 셋째 개인 및 특정 법인의 신문·방송 등의 독점 및 겸영 금지, 넷째 각 지방 주재기자들의 철수, 다섯째 언론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일 민영통신사 신설, 여섯째 언론인의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언론사 경영주들이 보안사 언론대책반 앞에서 스스로 언론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이는 당시 군부 주도하에 일부 언론학자와 언론인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1988년 열린 국회 언론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으로 대체되는 1988년까지 그 위력을 발휘한다. 그 후 이른바 보도지침 사건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언론 통제 실태가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이 시기에 어떻게 정치권력이 방송에 개입하고 간섭하였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방송 역사에 나타난 방송은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입장과 이해에 따라 방송의 제도와 형식 그리고 내용에 영향을 받아 왔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80년 방송 역사를 통해 나타난 방송은 정치권력에 순치되어서 관료적 계도성과 선전매체로서의 방송의 정체성이 내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방송 행정 담당자, 방송 현업 종사자 그리고 방송학자 등 전문가 집단은 우리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정책이 공보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는 우리 방송이 정치적 영향력하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방송 80년을 통해 한국 방송은 이론상으로 가능한 거의 모든 방송제도를 경험해 왔다. 문제는 방송제도의 변화가 기술 변화나 방송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한 정치적 요인의 결과라는 점이다.

새로운 방송매체를 도입하거나 관련 제도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방송 유관기구의 변화 등이 나타나는 시기는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 곧 정권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방송제도의 변화는 예외 없이 정권 변화와 맞물려 있거나 최고권력자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점 그리고 새로운 방송제도가 도입되거나 방송망이 확장될 때에는 예외 없이 정권 인사들과 관련을 짓게 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의 방송도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1990년대 이후는 그 이전과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임과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과 방송계 주요 인사 선임 과정에 늘 정치권력 개입 시비가 일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조금 제가 첨언하자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말 오랜 진통 끝에 통과시켰던, 지난 윤 정부가 그토록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로막혔던 방송 3법의 취지가 바로 이 대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여권이, 정치권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방송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놓고자 개편을 하면서 방송 3법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 이 논문 저자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방송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서 고착화된 정치권력의 방송 통제 관행을 탈피하는 문제와 어떻게 하면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비록 현행 방송법 이후 방송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라는 망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전히 방송사 경영진의 선임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고 방송의 일거수일투족을 정치적 문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바로 낭독해 드린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첨언한 우리 방송 3법의 개혁을 시작으로 바로 오늘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방미통위법 등을 또 전환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

다.

이 논문이 작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정말 이런 평가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지난한 언론개혁의 과정에 어떤 반성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언론개혁을 발맞춰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난 정부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국민에게 방송과 언론을 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평가를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를 상업자본과 방송에 대한 평가로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방송 영향요인은 자본인데 자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방송에 영향을 끼친다. 방송 소유를 통한 영향력 행사와 광고를 통한 재원 조달로 인한 영향, 즉 광고의 영향이다.

방송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본은 우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자본의 이미지를 관리하며 나아가서는 기사나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간접광고하면서 자본 축적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은 보다 구조적인 수준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친재벌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독점자본이 소유·경영하는 방송은 이윤 추구를 조직의 일차적 목표로 추구한다.

더구나 자본의 축적 과정이 정부의 주도와 정치권력의 특혜 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독점자본이 소유·경영하는 방송은 자연히 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지요.

일제하의 방송이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민간조직체인 사단법인 형태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방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 스스로 마련하는 조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방송은 시작부터 자본의 논리로 운영되는 역사적 뿌리를 갖게 되었다.

자본이 방송을 소유·운영하면서 광고가 주재원인 본격적인 상업방송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신료가 방송의 주요 재원이었다. 1956년 민영상업TV인 KORCAD-TV…… 지금 제가 이 영문을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서 일단 이니셜 그대로 읽었습니다. 1959년 부산문화방송의 개국 이후 본격적인 민영 상업방송이 도입되면서 광고가 방송의 주요 재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즉 자본이 직접 방송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송제도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자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상업방송은 방송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광고주에게 팔아서 영리를 취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상품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이루려 한다. 프로그램의 상품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광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 필연적으로 시청률 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이후 한국 방송은 공익을 목표로 하는 공영방송과 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영 상업방송이 공존하면서 뚜렷한 방송 이념을 갖고 운영되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변종의 방송 관행을 만들어내게 된다.

방송 이념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공익과 이윤이라는 상호 배타적 목표를 방송 철학으로 추구하는 이른바 다원적 방송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자본이 한국 방송의 중심적 작동 원리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고민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상업자본이 운영하는 방송이 어떤 이념과 원칙을 추구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이 방송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삼성이 방송을 소유하고 경영하기 시작한 것은 5·16 직후 방송 허가권을 얻은 라디오 서울과 동양텔레비전의 경영권 인수부터다. 군사정부에 도움을 준 인물들에게 특혜 부여 방식으로 김용우와 이원우 등에게 TV방송국의 가허가가 주어지는데 이를 삼성이 매입함으로써 삼성의 방송 소유 및 운영이 본격화된다. 최초의 민영TV 방송인 동양방송의 경영 방침에는 대중문화 향상을 뒷받침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과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생산기업 운영을 위한 매개자로서의 최선의 봉사를 다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는 동양방송이 상업방송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목표를 위해 방송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삼성의 의도는 자본이 신문, 라디오, TV 등 복합 매체를 소유·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론 운영을 통한 재화재생산을 꾀하는 한편 자본주가 운영하는 거대한 기업군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68년부터 1971년 사이에 전국 16개 도시에 대대적으로 지역 민영방송사가 설립되는데 방송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 방송의 자본 성격을 규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5·16 주체세력을 포함한 당시 공화당의 실세들이 자신의 연고 지역의 방송국 설립 허가를 받게 된다. 민영 상업방송을 운영할 만한 자본이나 지역 기반이 거의 없는 중소도시에까지 지역 민영 상업방송이 허가된 사실은 이들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정부의 방송국 허가에 필요한 도시 규모나 설립 기준보다는 집권 정치 세력들의 연고 지역과 직접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 실세들이 중심이 되어 방송국 허가를 얻고 이어서 지역에 연고를 가진 기업 자본이나 지역 신문사와 결합하는 형식을 빌리게 된다.

예컨대 군사정부의 실세였던 이후락, 박종규 등은 5·16 주체세력과 김성곤, 김진만 등 공화당의 실세 또는 이들이 운영하거나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방송을 소유·운영하게 된다. 권력이 자본과 결탁하여 방송을 소유하고 운영함으로써 기형적인 방송 자본을 형성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70년대에 형성된 상업 자본의 방송 경영 참여 문제와 방송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에 있어서 광고 비중의 증대로 인한 자본 의존도 증가는 방송 조직의 목표나 조직 구조의 변경 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추세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KBS의 경우 연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방송 수입의 60% 이상을 광고 수입에 의존해 왔고 1980년 방송 통폐합 이후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MBC의 경우에는 거의 100% 재원이 광고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공익을 추구하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목표로 전환이 되었으며 이런 조직의 목표 변경은 조직 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각 방송사 및 방송 관련 계열사나 방계 조직 구조 및 이에 관한 변천 과정을 추적

해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분명해진다.

이렇게 살펴본 대로 우리 방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분명히 정치권력과 자본이라는 두 축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이 2007년에 쓰인 것인데요 2007년까지 그 이전에 정말 우리 언론과 방송 그리고 정권과 자본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겠고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 자료는 이미경 전 국회의원님이 'IPI(국제언론인협회)와 한국언론의 관계, 그 숨은 진실을 밝힌다'라는 제목하에 발간하신 정책 자료집입니다.

이 IPI 본부가 한국의 독재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그 전모를 각종 사료들을 통하고 각종 글들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언급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일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방송이 자본과 정부와만 어떤 유착 내지는 갈등 관계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IPI라고 하는 국제언론인협회와 한국 언론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IPI에 관한 자료집을 읽을 텐데요. 우선 자료집 발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경 전 의원께서 쓰신 서언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집이 발간된 것은 2001년 9월이었는데요. 이게 2001년 당시에 굉장히 좀 뜨거웠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IPI, 아까 말씀드렸지요, 국제언론인협회입니다.

IPI 특별조사단은 지난 9월 6일 방한한 지 하루 만에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은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지 않고 있으며 기자들의 의견 피력도 자유롭다'고 평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지 않는데도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다니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IPI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은 61년 한국위원회 출범 이후 근 40년간 고작 네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혹독한 언론탄압이 자행되던 군사독재 시절 10년에 한 번꼴로 서한을 낼까 말까 하던 IPI가 국민의 정부—즉 김대중 정부지요—에 들어와서는 99년 보광그룹 세무조사 관련 3건, 2000년 검사들의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1건,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4건 등 총 여덟 차례의 공식 항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1000여 명의 언론인이 강제로 쫓겨날 때에도, 보도 지침이 폭로될 때에도, YS언론장학생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에도 조사단 단 한 번 파견한 적이 없던 IPI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이때에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이 분명합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IPI의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을 보면서 IPI의 진실을 찾아보았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자료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다행히 국회도서관에서 제한적이나마 IPI 리포트를 확보할 수 있었고 언론재단의 신문과 방송, 동아일보 사보인 동우, 조선일보 사보, 편집인협회보, 기자협회보, 방일영선생화갑기념문집 등을 통해 IPI와 한국의 인맥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찾으면서 군부독재와 권언유착이 우리의 현대사를 굴절시킨 것과 같이 IPI 한국위원회, 한국의 독재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IPI 본부가 한국의 언론 상

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론 발전에 중대한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IPI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그동안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엮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언론은 특정 집단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 말을 IPI가 명심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IPI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1년 9월 국회의원 이미경.

이렇게 자료집의 서언을 작성하셨고요. 당시에, 정말 지금으로부터 20여 년도 훨씬 전이지요. 그 당시에 이미경 의원께서 이런 자료집을 긴급하게 모아서 만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당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정권이 국민의 정부로 기존의 군사독재 정부가 교체가 된 이후에 오히려 보수 언론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언론개혁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 활동도 좀 특수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좀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는 IPI(국제언론인협회)가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활동을 했지만 실상과 다르다 그런 지적을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한번…… 그 자료집을 전부 다 읽기는 좀 어렵겠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으나 그중에서 긴급발표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발표문은 그때 2001년 9월 7일 IPI 특별조사단이 한국을 IPI 워치리스트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IPI의 한국 언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실상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긴급발표문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긴급발표문.

IPI 특별조사단은 자신들의 과오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IPI 특별조사단이 방한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을 IPI 워치 리스트에 올리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IPI 특별조사단에게 묻습니다. 조사도 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발표하려 했다면 굳이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IPI는 각국의 편집인과 발행인으로 구성된 국제언론단체입니다. 언론인의 일차적 존재 이유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보도에 있으며 사실 여부는 정밀한 취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IPI 특별조사단은 취재도 하기 전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한 당사자의 얘기만 듣고 쓴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불편부당의 원칙은 언론의 기본입니다. 이런 편파적인 IPI 특별조사단은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IPI와 IPI 한국위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글을 발표합니다. 저는 IPI가 한국의 언론 상황을 왜곡해 온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제적 언론단체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61년 한국이 IPI에 가입한 후 IPI가 한국의 언론 상황을 왜곡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이 좀 참 흥미롭습니다.

78년 1월 IPI는 한국 언론을 미국, 스위스와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16개 언론 통제

유형 중 단 하나만 저촉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는 긴급조치 9호가 발효되던 때인데도 말입니다.

또 IPI는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수차례 제외했습니다. 79년과 80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탄압의 역사를 지웠다는 말이겠지요.

다음, 81년 3월 케냐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당초 강경한 한국 결의문이 한국대표단의 로비로 수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당시 문공부 직원 15명이 파견되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81년 9월 IPI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그는 언론자유는 원칙론에 불과하며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정보 전달을 하면 된다는 것이 IPI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재자와 똑같은 논리였던 것입니다.

다음, 84년에도 한국을 방문합니다. 당시는 보도지침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IPI는 전두환을 만나고 난 뒤 '의심할 여지 없이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85년에도 한국의 많은 해직 언론인들이 복직했다고 썼습니다. 1300명 중 단 28명이 복직했는데 많은 언론인이라고 확대 해석했습니다.

86년 보도지침 사건, 88년 중앙일보 기자 테러 사건 등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93년 IPI 사무국은 95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대신 IPI 세미나를 스폰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IPI 서울총회 개최가 이런 주고받기 식의 협상 결과였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94년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해서 '언론은 특정 집단을 대변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지금—즉 그 당시지요—특정 집단의 대변자가 되어 있습니다.

IPI는 자신들은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 자유가 가장 위협받던 시절을 이렇게 왜곡해 온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IPI가 한국의 언론 상황을 왜곡해 온 역사의 뒤편에는 IPI 한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IPI 한국위원회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국내의 언론이 탄압을 받는 상황이라 하여도 국제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한국 문제의 의제화를 면하고자 갖은 로비와 추태를 일삼았습니다.

IPI 한국위원회는 군사독재 시절 IPI 무대를 독재의 언론탄압을 고발하는 장으로서가 아니라 독재를 옹호하는 로비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70년대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기관원의 감시를 뚫고 독재의 언론탄압 실상을 IPI에 전해 주려고 할 때 그들은 IPI를 사교의 무대로 여기고 뜨거운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어서 계속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PI 한국위원회가 출범한 첫해인 61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IPI 본부는 구명운동을 했는데도 왜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쓴 동지를 배반했을까요?

IPI 한국 위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모 언론인은 비록 국내에 문제가 있더라도 국제적으로 창피당하지 말자면서 IPI 무대 뒤에서 온갖 로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80년 언론 대학살에 동조하였습니다. 신문협회 총회에서 자율 정화를 부르짖은 후 일

부 언론사주들은 보안사의 해직자 명단을 거부하기는커녕 구미에 맞지 않는 언론인을 끼워넣기 식으로 해직시켰습니다.

81년 나이로비 IPI 총회에 가서 한국의 80년 언론 대학살을 강경하게 비판하려던 IPI 한국 결의문을 폐기하기 위해 특별기부금까지 제공했습니다.

81년과 84년 IPI 간부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언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지 않고 군사독재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85년 모 기관의 동아일보사 소속 언론인 강제 연행, 폭행 사건을 조사하러 오겠다는 IPI의 제안을 도움이 안 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86년에는 IPI 총회에서 일부 한국의 언론인들은 IPI가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면서 IPI를 탈퇴하겠다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상훈 IPI 부회장—당시 부회장이지요—은 92년 IPI 총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연설했는데 국내에 와서는 보안법 사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백으로 알려졌다시피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시 언론사주들은 정권과의 뒷거래를 통해 추징금을 감면받는 추악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95년 서울 총회 때 정부로부터 8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IPI 한국위원회는 정부의 홍위병이었단 말입니까?

그 어두웠던 시대, 기자협회는 IPI의 자그마한 한국 관련 보도를 금과옥조처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주들이 독재를 비호하는 로비를 하고 다닐 때 양심 있는 언론인들은 기관원의 눈을 피해 한국의 언론탄압 실상을 IPI에 전달하려고 했던 눈물겨운 사연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IPI는 결정적 고비마다 독재의 치열한 로비에 휘말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곤 했습니다. 언론의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권언유착의 현상에 대해 IPI는 한 번도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에 밉보이면 좋을 것 없다는 사주들의 로비에 휘둘리기 일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IPI는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국가보안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 놓고 안에 들어와서는 색깔론을 퍼트리는 한국 신문의 행태를 그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재벌과 부유층의 탈세를 엄단하라는 사설을 연일 발포하던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탈세에 대해 무작정 변명만 늘어놓는 이중성을 어찌 그들이 알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IPI가 편향된 정보만을 섭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관적 선입견으로 한국을 진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IPI 특별조사단에게 요구합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미경 의원님께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이 자료집에서 당시에 IPI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 특히 독재 정부 내지는 보수언론, 그런 로비와 구명운동에 어떻게 휩쓸려 갔는지, 그러면서 한국 언론의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이해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에서 언론을 독재 정부와 같이 탄압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 계속되었다.

앞서 제가 요지 형태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관련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자료집, 사설이라든지 각종 세계 언론자유 평가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사료들인데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담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국민들께서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이 자료집도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언론, 특히 보수적 언론들이 국제적인 언론을 활용하면서도 당시에 국민의 정부를 마치 언론을 굉장히 탄압한 정부처럼 비판하고 그런 왜곡된 내용으로 활동을 했다는 사실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라고 해서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이 다 된 과거인데요. 그때 군사독재 정부에 이어서 문민정부에 이어서 정권을 교체하고 탄생한 정부에서 언론개혁을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이런 또 새로운 형태의 언론과의 갈등과 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지금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기는 했으나 또 향후에 제대로 한번 상세하게 평가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부침들, 언론과의 관계, 특히 해외의 지원까지 받았던 보수언론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방송의 독립성 강화, 미디어 다원화,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잠깐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국 방송 8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고 했던 그 논문에서 발췌해서 읽어 드렸던 그 내용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김대중 정부의 언론개혁의 시발점을 마련했던 그 성과들에 이어서 이후 노무현 정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노무현사료관에서 저희가 찾아낸 그런 자료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 자료에서 어떻게 그 당시의 노무현 정부와 언론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작성자는 권영준이고요.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가 2012년 2월 23일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하자마자 언론과 참으로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료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중동 보도에 시민들이 분별력 갖고 권리 찾아야, 2001년 언론과 전쟁불사 발언 진의와 언론개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언론에 의해서, 뭐랄까요 좀 심각하게 재단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갈등을 빚은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정치권력과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이 야합하고, 언론을 독점한 몇몇 신문들의 특권을 용인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보수 언론, 특히 수구 족벌신문들은 수구 및 냉전 이데올로기를 재생해 가며 보수 정권 창출에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98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 국면을 맞는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후반에 들어서서야 언론과의 유착 미련을 버리고 관계 정립에 나선다. 2001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국세청의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실시되었다. 94년 김영삼 정부 때도 1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있었으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언론과 거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은 이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는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모든 기업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언론 기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미뤄 왔었다. 더욱이 조선·중앙·동아가 자전거와 상품권 등 경품을 뿌려 대며 7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시장의 혼탁상은 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정권의 언론 탄압이라고 공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 전 2009년 가진 한 인터뷰에서—강상중 도쿄대 교수의 책 '반걸음만 앞서가라'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언론사 탈세조사를 하면서 엄청난 반격을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주눅이 들었으나 이전 정권처럼 타협하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김대중 정부와 족벌신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 싸움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 갔다. 언론과의 싸움에서 여권의 많은 정치인들이 몸을 사린 것과 달리 정치인 노무현은 세무조사를 옹호하며 선봉에 섰다. 당시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있던 때였다.

언론과 전쟁불사 진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2월 6일 해양수산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소관 부서 정책을 놓고 질의와 답변이 오가던 중 언론사 세무조사가 튀어나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언론사 세무조사 중단 요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언론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물었고 '못 할 거 뭐 있냐'라는 말이 부풀려져 기사화되었다. 이른바 '언론과 전쟁불사' 발언이다.

9일 자, 그러니까 2001년 6월 9일이겠지요. 9일 자 조선·중앙·동아·한국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사설들은 '노무현 장관의 위험한 언론관', '세무조사 배경에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라면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당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었냐는 논란이 일자 당시 노무현 장관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은 권력이 언론과 전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 시민이나 정치인이 너무 언론에 굽실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는 말이었다. 전쟁이라는 말은 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횡포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지금 읽어도 저는 굉장히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보도에 간섭하거나 초법적 권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었다.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는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 간의 마찰은 불가피했으나 유착을 단절할 계기였다. 문제는 만약의 경우 타협으로 조사가 유야무야된다거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3월 발간된 책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속 '내가 선택한 길을 내 뜻대로 걸었다'라는 글에서 당시 싸움에 나서게 된 배경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이 땅에 다시는 권언유착의 잘못된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집권 여당의 중진으로서가 아니라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 온 당사자로서도 당연히 나서서

주장해야 할 사안이었다'.

당사자성을 그때 크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이 연일 지면을 털어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니 사회적 논란이 됐다. 조중동 기자들은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돼 싸움판에 뛰어들었다. 검찰에 출두하는 사주를 비호하기 위해 기자들이 검찰청 앞에 조직폭력배들처럼 도열하는 참담한 모습까지 연출됐다.

한겨레·경향·대한매일은 조중동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불공정 경쟁으로 왜곡된 신문시장과 신문산업 전반에 위기의식이 퍼지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다른 신문사들과 방송은 중립적 위치였다.

이 단락은 '언론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라는 단락입니다. 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4개월여에 걸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23개 언론사에서 1조 3594억 원 규모의 탈루소득이 드러났고 세금 5056억 원이 추징됐다. 탈세와 횡령 혐의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조희준 국민일보 회장 등 족벌신문 사주들이 구속됐다. 나중에 구속된 사주들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신문고시에 의한 시장 규제도 사실상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무조사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 간에는 개혁 공방이 가열됐다.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는 언론의 구조적 개혁을 주장했다. 언론사 소유구조 개편,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 공정한 판매구조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2001년 6월에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물러나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6월 7일 자 언론비평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언론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언론개혁은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이 우선이며 언론 간의 경쟁은 보도의 품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사가 배송시스템의 기득권이나 우위를 갖고 경쟁하는 것은 문제며 공동배송제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광고주로부터 독립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어 28일엔 전국언론노동조합 초청으로 기자와 피디, 언론노동자들 앞에서 '언론의 자유는 사주의 자유가 아니다' 제하의 강연을 한다. 내용은 세무조사로 논란이 일었던 언론자유와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 등이었다. 강연에서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주의 탈세 및 초법적 특권 행사는 아니며 기자들의 취재보도의 자유임을 강변했다, 당연한 말이지요. 이어 언론 세무조사로 권언유착 청산의 계기가 마련됐으므로 정부와 언론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정도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언론장악이라고 모함하고 역사 발전을 가로막는 수구 특권언론과는 시민들이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구 특권언론으로 지목했던 것은 조중동이였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다시 싸운다. 이후 조선일보와 맞서 싸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또 쭉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다시 조선일보였을까? 당시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중동의 목표는 보수정권의 탈환이었다. 특히 조선일보 지면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회창 총재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사설과 칼럼을 통해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앞서 인용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한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의 발언이다.

한번 또 볼게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선일보식 정치구도를 만들고 있다. 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은 개혁세력 방어를 위한 전략이며 몸부림이다’.

조선일보식 정치구도란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에게 유리한 선거구도 조성을 두고 한 말이었다. 조선일보는 보수정권 탈환을 위해 이회창 대세론에 이어 여권 후보로 이인제 씨를 띄우고 있었다. 영호남 지역 대결 구도 그것이 노림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간파했다. 그리고 아예 공개적으로 조선일보를 이회창 기관지로 규정했다.

그리고 9월 12일 ‘조선일보의 특정인 후보 만들기 음모에 대한 입장’이란 개인 성명을 낸다. 이어 11월 들어서는 민주당 대권주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던 와중에 조선일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 버린다.

당시 한겨레 11월 19일 자 기사입니다, 한겨레를 통해 밝힌 조선일보 인터뷰 거절 이유. 또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반민주적인 특권 집단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권위와 신뢰를 높여 주는 어떤 인터뷰도 응할 수 없다. 나는 조선일보의 장사거리가 되지 않겠다. 조선일보는 민주화 과정에서 남은 마지막 특권 세력이자 성역이며 이 특권 세력을 실질적 법치주의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민주화운동이다’.

여권의 대권 경쟁에 뛰어든 후보가 이 땅의 최대 발행부수 신문과의 싸움을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와의 싸움은 정치인 노무현을 여권의 대통령후보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후 정국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한패가 되어 김대중 정부를 공격했다. 그 싸움에 정치인 노무현은 몸을 던졌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개혁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국민경선 결과, 여권의 대통령후보가 되면서 그 싸움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이후 선거 과정에서도 조중동과 싸운 탓에 어려운 고비가 많았다.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후 지지율이 하락하여 당내에서 후보를 흔들어 댔을 때 그 이면엔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가 한몫했다. 하지만 싸움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언론 환경은 과거와 달라져 있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티조선 운동을 조직했고 98년 조선일보의 최장집 사상 검증을 계기로 이 운동이 확산됐다.

신문사 간 카르텔은 붕괴되어 조중동과 한경대—한경대는 한경대학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겨레, 경향, 대한매일이겠지요—간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조중동의 여론 장악력과 의제 설정 능력이 과거와 같이 위력을 갖지 못했다.

더욱이 노무현 지지자들은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2001년 11월 10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노무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단합대회에서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은 이런 요구에 답한다.

‘소수 특정 언론이 민주당을 이렇게 방해하며 두들기는데 앞으로 태어날 민주당을 얼마나 흔들 것이냐, 이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특권을 누리는 수구 언론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과정은 신문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과정에서 언

론개혁을 위해서 전 싸울 것입니다. 이제 권력이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정권은 국민의 지지 위에 탄생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나가는 전 기간 동안 우리 당의 후보를 공격하는 언론과 우리 당원들이 맞서 싸운다면 언론은 민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심은 언론개혁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대목을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일단은 제 톤으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언론개혁 과제에 답하다'라는 내용입니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어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와 언론 간의 유착을 완전히 끊는 한편 언론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언론과 비정상적으로 협상할 여지를 주는 가판 신문 구독이 금지됐고 개방과 공평,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언론사에 취재 환경을 제공하는 브리핑제 등이 시행됐다. 그리고 언론의 오보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조중동뿐 아니라 때로는 언론 일반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진통이 컸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2005년 1월에 국회에서 개혁 입법으로 신문법이 제정됐다. 여야의 정치 공방 속에 누더기 입법이었으나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탄생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에서 미디어 악법 날치기 속에 신문법은 재개정됐고 두 기관은 폐지됐다. 이후 정권과 결탁한 조중동은 그 대가로 종편채널의 특혜를 받아 챙겼다.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반발 속에 언론개혁은 진전이 없었다.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는 온존됐고 시장 독점도 개선되지 못했다. 언론사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위한 인식 전환은 요지부동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싸운 결과는 혹독했다. 조중동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권 기간 내내 온갖 왜곡과 편파, 불공정 보도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짓밟았다. 그런 가운데 여론은 조중동이 짜놓은 프레임의 덫에 갇혀 버렸다.

그다음, 이 사료 이야기에서는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1년 6월 28일 김대중 정부 언론 세무조사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초청 강연을 했던 그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 강연도 사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시간이 좀 남게 되면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 탄압의 아주 세세한 역사 자료를 찾지는 못했고 당시, 그러니까 한 2012년 3월경에 진행되었던 언론광장·새언론포럼 주최 정부 언론탄압과 공영방송의 몰락 토론회에 대해서 기사를 쓴 오마이뉴스 기사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 당시 패널들이 했던 발언들이 또 좀 구체적으로 실려 있어서 그 당시의 현황을 조금은 생생하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사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과 검찰 수사, 전 정부에 대한 표적수사, 공안기구를 동원한 민간인 사찰, 고문수사,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검열, 언론장악 시도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통치를 재연했다. 인권의 침해가 심각해졌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위축됐으며 경찰의 폭력은 영하 날씨에도 거리낌 없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기까지 했다.

저도 그 당시가 좀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갑니다.

2012년 3월 7일 저녁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언론광장과 새언론포럼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몰락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말살을 발제한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가 지적한 말이다.

그는 검찰은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네티즌, 정치인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수백 명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으며 촛불시위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불러왔다면서 내정하는 고위공직후보자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탈세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도 했다. 김 감사는 정부 운용이나 민생과 복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권력에 의해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삶은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전세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명박 정부 4년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실패한 4년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수많은 기자와 피디들이 해직되거나 현업에서 쫓겨났다. 몇몇 언론인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정을 드나들어야 했다. 이에 반발한 언론인들은 중징계에 처했다.

뉴스를 전하는 언론인뿐 아니라 미네르바 등 인터넷 논객의 처지도 비슷했다.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 언론단체들로부터 언론자유도 순위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엔은 각종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꿈쩍 않는다. 오히려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미디어 공공영역의 붕괴, 공영방송의 궤멸적 위기, 권언동맹과 여론 다양성 훼손, 먹통 정부의 인터넷 외면, 꼼수를 동원한 저강도 전방위 통제, 저널리즘의 몰락과 공론장 붕괴, 부분적 언론자유국 자초, 대안매체의 열풍, 권력으로 간 언론인들의 말로, 언론인의 자성과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 등의 현상들이 나타났다고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꼼수에 의한 저강도 언론통제를 폈다면서 정권에 장악된 관제 언론사의 낙하산 경영진들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또 기사 인용문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MB의 낙하산으로 방송사를 장악한 점령군들이 비판적인 직원들을 솎아 내고 시사프로그램을 없애 버린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방송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비

판적인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저녁 9시 시보와 함께 대통령 동정을 내보내던 형식적인 땡전뉴스는 없어졌다. 하지만 내용을 곰곰이 따져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따르는 저강도 땡박뉴스가 등장했다는 비아냥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는 커뮤니케이터 통제(기자 활동 통제), 미디어 통제(언론사 장악), 메시지 통제(방통심의위의 정치 심의), 수용자 통제(미네르바 구속) 등으로 이루어졌다고도 피력했다.

이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MBC와 KBS 기자들의 제작 거부와 노조 파업, YTN과 연합뉴스의 파업, 국민일보와 부산일보의 투쟁 목표는 본질에서 편집권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친정부 편향뉴스에 저항해 뉴스의 공정성 회복을 주장하고 사장과 보도책임자의 사퇴 및 인적 쇄신을 촉구해 온 언론인들의 투쟁은 사 측이 일방적으로 휘둘러 온 편집·편성권을 기자 전체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어서 2013년 체제의 지향점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진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복지사회와 공정·공평사회론, 생태전환론을 주요 요소로 해야 한다면서 올해 양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복지, 남북평화, 환경, 노동,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언론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19대 총선 미디어연대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제안한 3대 의무와 35대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다음은 또 다른 발제자에 대한 인용 부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최용익 전 새언론포럼 회장의 발제문입니다. 그중의 일부가 기사에 인용되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공영방송 체제의 몰락: 방송저널리즘의 재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제한 최용익 전 새언론포럼 회장은 현재 반민주적 공영방송에서 새로운 공영방송으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방송 3사가 자발적으로 각자 입장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파업을 결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그만큼 방송현장에서 비정상적·파행적·반민주적 지시와 명령, 부조리한 행태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현 업자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MB 정부 들어 방송 3사는 권위주의 시대의 관제방송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방송인들은 더욱 현장에서 취재를 거부당하거나 기획 아이템이 데스크에 의해 이유 없이 잘리거나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이 결방되는 등의 과정에서 느끼는 자괴감이 엄청났으리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 정권 4년 동안 일어난 방송계의 변화로 경영진과 간부급 사원들의 물갈이, 프로그램 탄압과 저항적 방송인 격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종편 특혜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체제 재구축을 위해서는 단기적 방안으로는 처절한 끝장투쟁, 낙하산 사장 퇴진 후 중기적 방안으로 철저한 인적 청산, 법과 제도적 정비에 의한 지배구조의 개혁, 편집권 독립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그리고 근본적 장기적 방안으로 출입처 제도의

혁파, 다단계 게이트키핑의 개선, 다양성과 개방성이 살아 숨 쉬는 제작 현장의 건설 등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MBC는 미디어렙, KBS는 수신료 등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사 이기주의의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대화와 토론, 소통과 연대가 절실하다면서 전국언론노조와 각 방송사 노조 사이에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작게는 방송 3사, 더 나아가 전국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 노조들이 만들어 내는 공조체제의 촘촘함에 이번 싸움의 성패가 걸려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한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말살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은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패널들의 발언들의 인용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이명박 정부 그때 2012년, 4년 차 5년 차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얼마큼 이명박 정부하에서 우리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탄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사회 또 학계가 얼마나 우려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정부지요. 이명박 정부에 뒤이어서 등장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볼 텐데요. 이것도 2017년 3월 15일 기자협회보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가다 보니까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 또 한번 계속 우리 역사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기자협회보 제목은 '박근혜 언론 농단 차고 넘친다'인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 2017년에 이 기자협회보에서는 또 어떻게 박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

'피청구인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이 기사가 작성됐을 당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이후여서 그에 맞춰서 작성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결정문을 읽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세 차례에 걸쳐 언론이라는 글자를 입에 담았다. 그중 두 번은 재임 기간 언론을 농단했다는 내용이었고 한 번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데서 나왔다.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한 다른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언론과 불통했고 사사건건 언론에 개입했으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는 소송 등으로 통제했다. 그게 부메랑이 되어 박 전 대통령은 언론보도를 계기로 탄핵됐다. 기실 박 전 대통령은 언론 농단만으로도 이미 탄핵감이었다.

불통, 박 전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불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한 지 316일 만에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 고작 다섯 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적

은 횟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할 때마다 질문지 사전 유출, 전년도 내용 재탕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첫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선 시종일관 머리를 숙여 가며 참모진이 써 준 대본을 읽었고 매번 짜맞추기식 질문과 답변으로 일방적 담화를 진행했으며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선 회피했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가졌지만 기자들의 질의를 허용하지 않았고 1월엔 급작스럽게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겠다고 통보하더니 기자들의 노트북과 카메라 소지는 금지했다. 또 지난 1월 25일에는—2017년 1월 25일입니다—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언론 인터뷰를 보수 성향의 정규재 TV와 단독으로 하며 시종일관 변명의 말을 쏟아 내고 게이트의 본질을 흐렸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등을 통해 프로파간다를 쏟아 냈을 뿐 진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기보다 자기 의사만을 고집하려 했다고 말했다.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며 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 전 대통령은 막상 당선되자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에 개입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전국언론노조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KBS 이사와 사장 임명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메모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극우 뉴라이트나 선거캠프 인사를 임명했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민간 영역인 유료방송에도 낙하산을 내려보냈다. 윤정부와 기시감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인사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비서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기사를 빼라 넣어라 지시했고 지난해 국정조사에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의 보도 자제·회유 압력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에 숱하게 전화해 보도 방향과 기사 항의, 인사 개입, 심지어 패널 첨삭 등의 흔적을 덕지덕지 남겼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개입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언론사를 통제하려 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을 언급하며 '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쓰여 있다. 비망록에는 JTBC 심의제재, 채널A 프로그램 폐지, YTN 해직자 사찰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와 청와대 관계자를 비판하는 기사에는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꾸준히 이어졌다. 본보, 즉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당시 언론에 알려진 것만 17건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언론엔 보복이 잇따랐다. 2014년 정유라 씨 아시안게임 선발 특혜를 보도한 시사저널은 세무조사는 물론 가판 판매망까지 경찰수사를 받았고 그

해 11월 십상시 국정농단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는 통일교 재단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박근혜라는 사람은 언론자유의 개념이 없다. 불통과 개입, 통제에서 보듯이 언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자유를 넘어서서 언론독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언론농단도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참으로 심각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했던 방송 3법 그리고 지금 제가 찬성토론하는 방미통위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르게 된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말 극심했던 언론탄압, 불과 3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집권을 시작하자마자부터 몰아쳤던 언론탄압이 배경이 되었다고 해도, 윤 정부의 이러한 몰락의 배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정말 언론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장악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노골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언론을 길들이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쭉 조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는 2023년 12월 5일에 존경하는 민형배 국회의원께서 진행했던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을 통한 언론탄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자료집인데요.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 특히 수사기관을 통해서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참 특수한 모습을,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모색해 봤던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 입막음 사건이라는 제하의 고소·고발을 당했던 것을 정리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여러 단계와 조치를 거쳐서 지금 또 다른 양상이 되었을 텐데 적어도 그때 어떻게 윤 정부가 언론 내지는 관련한 인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서 그 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가운데 찬성토론에 배정받은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예쁜 PPT를 준비하지는 못 했는데요. 그래도 아마 쭉 들으시면 불과 얼마 안 된 사실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다시 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4월 10일, 이때는 윤 정부 아직 인수위 단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2022년 4월 10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MBC 담당 기자의 자택 및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때 전 열린공감TV 관계자를 고발했고요. 또 유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 MBC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7월에 또 이뤄진 고발인 것 같은데요. 관저 이전에 김건희 개입 의혹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안입니다. 한겨레가 대통령관저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한 것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을, 한겨레 이제훈 기자를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계속됩니다, 고발이. 2022년 9월 26일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당시 시의원이 MBC 박성

제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고발을 했는데요. 윤 정부 언론탄압의 대표적 사례였지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 기자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MBC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자막을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당시 이종배 시의원이 MBC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그 진행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또 2022년 9월 28일, 불과 이틀 사이로 또 다른 고발이 있는데요. 시민언론 더탐사 김시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비밀 술자리 제보를 받고 동선을 추적 취재하였다가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스토킹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주희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건은 지금 아직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탐사 기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례는 또 이어지는, 9월 29일인데요. 정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적으로 고소·고발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 관련해서 후속 고발인 것 같습니다. MBC 박성제 사장, 박성호 보도국장, 연보흠 디지털뉴스국장, 임현주 기자 등을 추가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2022년 11월 22일에는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빈곤아동 기획 촬영 의혹 제기한 장경태 의원 명예훼손 고발 건인데요. 당시에 참 장경태 의원도 이런 고발을 당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심장병 아동 방문 때 공개한 사진이 기획 촬영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대통령실이 고발을 직접 했습니다.

그다음 또 2022년 12월 19일, 심지어 당시 박진 외교부장관이었지요. 박성제 MBC 사장을 상대로 해서 역시 또 윤 대통령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첫 보도한 MBC에 대해서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것은 고소·고발 사안이 아니고 정정보도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일종의 민사소송을 아마 법원에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형사적인 고소·고발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전방위적으로 그 당시에 MBC를 상대로 해서 탄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23년 1월 30일 역시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전 국회의원을 고발했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대통령실이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의 상세한 내용들은 어차피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기사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상세 내용은 생략하고. 정말 계속 쭉 이어지는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상황에 대해서 또 계속 짚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으로 계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그리고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를 대통령실에서 2023년 2월 3일 또 고발을 했는데요,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설을 주장했다는 이유지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그의 저서를 인용하여서

보도한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워낙 유명한 사건인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4일, 계속됩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인데요. 구독자가 상당히 많은 채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 중에 7월 13일 동포 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7월 20일 유튜브 고양이뉴스 커뮤니티에 올린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면서 고발을 또 했습니다.

검찰 정권답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정말 다양한 형사 제재들을 가하려고 애를 쓴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2023년 8월에도 역시 또 대통령실은 한국일보, MBC 등 인용 보도 등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를 동원해서 트위터 실버 마크를 달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허위라고 반발하면서 그렇게 법적 검토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제가 이후에 폴로 업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다음은 2023년 8월 16일, 또 며칠 안 되었을 때인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가 YTN 우장균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YTN이 8월 10일, 그러니까 2023년 8월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 씨에 대해 보도하면서 배경 자료 사진으로 이동관 후보자의 사진을 내보냈다는 것이고 이에 이 후보자는 경위 파악과 사과를 요구했고요. YTN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부 조사 결과 단순 실수로 파악됐고 의도성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후보는 8월 16일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 23년 8월 23일 YTN 우장균 사장,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을 대대적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이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후보자의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7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에서 신학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뉴스타파 KBS MBC JT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을 또 고발한 사건이 있었지요. 대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은 2023년 9월 14일 역시 같은 국민의힘의 위원회들에서 김어준, 주진우·최경영 KBS 기자를 고발을 했는데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에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사실인 양 그대로 보도하여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힘당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2022년 5월도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면 2022년 5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김 여사가 한남동 공관을 둘러보다가 외교부장관 부인에게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했다'라고 발언한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직인수위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표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벌어진 국민 입막음 사건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당선 직후부터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

로 언론과 또 발언한 여러 정치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 검찰 검사 출신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언론탄압을 진행했다는 그런 특수성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같은 또 이 토론회 자료집에서 전 정부, 야당 인사, 노동·시민사회, 언론인 등 주요 사건 수사 압수수색 현황도 좀 싣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조금씩 발췌를 하면서 읽어 볼 텐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최대한 한번 발췌독을 해서 표를 잘 좀 이해를 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지요.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 사건 그리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사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사건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사건 또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 이게 TV조선과 관련되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관련한 수사로서는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보통 우리가 성남FC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등.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취업 청탁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게이트 수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번에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그 당시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지금 조망하면서 내용들을 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수사도 정말 강하게 진행이 되었지요. 건설노조 때리기, 우리 건설노조 건폭이라고 매도하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수사와 참 여러 탄압을 자행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노동단체한테 간첩단 사건도 수사가 들어갔었고요. MBC…… 아까도 말씀드렸던 언론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들도 그 이후에 쭉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수사 사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에 대한 수사들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쭉 진행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일지를 또 다시 한번 제가 표를 쭉 훑어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특정한 몇몇 수사,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언론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일지도 토론회 자료집에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또 쭉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후 7월 14일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지요. 그리고 7월 14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시 대표직무대행, KBS·MBC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9월 2일에는 한겨레의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습니다.

9월 22일에 미국 순방 중 바이든 대통령 만남 직후 비속어 발언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서 9월 2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 유출 관련해서 MBC에 항의 방문을 하고 이후에 계속 또 그 관련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 사이에, 10월 4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학생문화공모전 수상작인 윤석열차 선정 및 전시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는 그런 해프닝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았던 11월 9일에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에 MBC 취재 제한을 통보하고 이로 인하여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11일, 지금 계속 2022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1일에 기획재정부에서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하고요.

11월 15일에 서울시의회는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이릅니다.

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시작한 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또 이틀 뒤인 11월 23일, 한전KDN 이사회는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하지요.

12월 2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의결을 처리합니다.

12월 6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천공 관저 이전 개입설을 제기했던 김종대·김어준 씨를 고발합니다. 같은 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탐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또 고소를 하고요. 그다음 날인 12월 7일, 경찰은 그 사유로 더탐사를 압수수색합니다.

12월 12일에 박성중은 KBS·MBC 이사진 비율을 언급하며 하나도 못 먹고 있다고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12월 16일에는 서울시가 TBS 2023년 예산 88억 원 삭감을 확정했습니다.

며칠 뒤인 12월 19일, YTN은 윤석열 대통령 리허설 돌발영상 사내 징계를 추진했습니다.

12월 22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시사프로 패널 균형을 맞추라면서 방송사에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지상파 3사, 종편 4사, YTN, 연합뉴스TV 등입니다.

12월 19일에는 YTN에서 돌발영상 제작진 경고·주의 조치를 내리고요. 보도제작국장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김어준·주진우, TBS 뉴스공장에서 하차합니다.

2023년은 1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회견도 생략하고 조선일보와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1월 4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배경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요.

1월 6일에 한전KDN은 매각 주관사 입찰 공고 및 매각 절차에 착수합니다.

1월 15일에는 외교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요.

2월 1일에는 이동재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가 확정되고 KBS 기자 2명을 고소합니다.

2월 3일에는 대통령실에서 관저 이전 천공 개입 의혹 보도를 한 한국일보·뉴스토마토 고발했고요.

2월 8일에는 팩트체크넷이 1월 25일 해산 결의를 발표합니다. 이 팩트체크넷이라는 팩트체크 활동 기관인데 지금 팩트체크 활동이 우리 미디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데 윤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더 중흥이 되어도 모자랄 이런 사실활동 확인이 사실상 초기부터 정말 탄압을 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미디어 환경 관련해서는 역사를 조망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월 22일에는 민언련에서 TBS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조례안 발안 추진을 시작하고요. 즉 서울시의회, 당시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자 시민사회가 나서서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조례안 발안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신문협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사전검열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정안 폐기 요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월 27일에는 국민의힘에서 민원을 공개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소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감사가 바로 또 실시가 됩니다.

3월 6일에는 KBS 감사가 세 번째 기간 연장이 되고요.

3월 12일에는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윤석열 대통령 고교 선배인 윤정식이 내정됩니다.

3월 14일에는 여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권 패싱을 한 채 방송문화진흥회의 검사·감독을 추진하고요.

3월 21일에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앞서 계속 언급드렸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사태가 표현의 자유 중 폭력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습니다. 4월 10일 대통령실에서는 KBS 수신료 제도 국민제안의 설문을 조작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4월 12일에는 YTN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해서 그 매각 주관사 선정 단계부터 입찰이 번복되고 유찰이 거듭되는 진통을 계속합니다. 같은 날 김태효가 미국 정보기관 도청 의혹 관련 질문을 한 한국 특파원에게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지요'라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언론을 억압했다는 그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3일 검찰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MBC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을 기소합니다.

4월 17일에는 보수성향 매체 및 보수성향 단체 출신으로 대다수가 구성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에 이르고요.

4월 2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한 언론중재위원의 10명 중 4명이 윤석열 캠프 언론자문위원 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23일에 경찰은 더탐사에 대해서 열일곱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4월 25일에는 윤석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중에 주어를 생략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국경없는기자회가 2023년에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이 47위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소식이어서 저희들이 또 큰 충격에 빠졌었지요. 같은

날 윤석열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으로 서울법대 동문 이상인을 지명하고요. 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 보류했습니다.

5월 14일에는 국민의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사권을 신설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5월 19일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KBS·MBC 허위 선전 선동대냐'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5월 22일에는 정부 여당의 압박 속에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고요.

5월 25일은 KBS 이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5월 30일에는 경찰의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했고요.

6월 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변인을 교원대로 발령하고 감사원 출신의 사무처장을 임명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발언으로 좀 더 큰 파장이 일기 시작했었지요.

6월 9일에는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이종국 전 KBS 대전방송총국 보도국장이 대전시청 자미디어센터장에 임명돼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6월 13일에는 2022년 정부광고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신문이 동아, 중앙, 조선, 매경, 한경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6월 15일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리포트에서 한국 뉴스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28%에 불과해서 46개국 중 최하위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언론 환경, 언론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 과정이 또 졸속 심사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요.

6월 27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정부광고 KBS·MBC 노영방송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진행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재인 정부 정부광고지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7월 3일에는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2TV 민영화를 주장합니다.

7월 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연합뉴스 지원금 공란으로 해서 1차 예산요구안을 제출하여서 공영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일어났었고요.

7월 5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여권 단독으로 의결을 하기에 이릅니다.

7월 10일에는 감사원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본감사에 돌입을 했고요.

7월 11일에는 TV수신료 분리 별도 고지 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7월 25일에는 검사 출신, 여권 출신 KBS 김종민 이사가 '개화 덜된 조선인들'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었었지요. 그 당일 방송통신위원회는 EBS의 명예 실추,

TV조선 재승인 의혹에 대해서 EBS 이사 해임 청문을 통보합니다.

7월 26일에는 김우석, 당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인데요, 공영방송 개념조차 없다면서 정연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7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 지명하고요.

7월 31일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에 음성적 기사용 광고와 함정광고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8월 1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뭐 이 발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성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8월 2일에는 방통위에서 KBS, EBS에 이어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해임을 추진하고요.

8월 4일에는 역시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실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9일에 역시 또 방통위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서기석·차기환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요.

8월 10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회가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하고요.

8월 10일 그 같은 날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 정미정 이사 해임 청문을 진행합니다.

8월 15일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VIP 격려 전화로 언론인 관리를 했다는 그 문건이 공개되어서 파장이 일었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 이동관은 YTN에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방송 사고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3억 원의 소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8월 18일에는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TBS 이사장에 선임이 되고요. 같은 날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위촉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1일에 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요. 다음 날인 8월 22일 윤석열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이 여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으로 내정이 됩니다.

8월 23일에는 방송 경력 없는 법조인 출신 서기석이 KBS 이사장에 선출이 되고요.

25일에는 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를 합니다.

8월 27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현주 위원장을 해촉한 데 이어서 사무총장도 면직합니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국민의힘 가짜뉴스특위 부위원장에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 임명이 되는데요. 국민의힘 입당과 출마 선언을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또 8월 28일 당일, 이동관 취임 당일인데요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강규형 EBS 이사 임명하고요. 또 당일 KBS 여권 이사진이 김의철 사장 해임을 제청합니다. 또 당일 부수 조작 조선일보·ABC협회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8월 30일 역시 윤 정부가 내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를 220억 원 삭감 편성하고요.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9월 1일에는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요.

9월 5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이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를 긴급 심의

강행을 또 시도하게 됩니다.

9월 6일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언론 규제 그때 또 발표 한참 했었지요. 당일에 또 정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저널리즘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하였고요. 또 당일에 방통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공식화하고요. 역시 당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면서 정민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다음 날인 9월 7일에 방통위는 EBS 감사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을 임명하고요. 당일에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 MBC 기자 7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다음 날인 9월 8일에는요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의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고요. 또 역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법정 공방에 돌입합니다. 폐지 이후에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반발을 크게 했었지요. 지금도 역시 싸우고 있습니다. 또 9월 8일 당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기 흔드는 공영방송 존립 재검토해야'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었었지요. 당일 또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방심위의 흑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11일에는 방통위가 개최돼서, 방송대상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참…… KBS·MBC 빼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또 역시 8월 TV 수신료 22억 원이 감소했고요. 분리징수 여파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당일 여권 다수가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KBS·MBC·TBS를 무더기 중징계했습니다. 그다음 날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안을 바로 재가합니다.

9월 1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용 자료를 국회에 미제출했고요.

9월 14일에는 검찰이 JTBC 및 뉴스타파 기자 2인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9월 14일 당일에 오세훈 시장은 김만배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TBS에 대해 집중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지시를 합니다. 당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서 김어준·주진우·최경영을 고발을 합니다.

그다음 날인 9월 15일 언론노조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요.

9월 18일에는 방통위가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을 합니다. 9월 18일 당일 법원에서는 권태선 보궐인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직무정지를 하고요.

9월 19일에는 경찰이 이동관 얼굴 방송사고로 YTN 구성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그런데 그다음 날 경찰이 이 영장을 신청하는 데 대해서 검찰이 반려를 했어요.

그리고 20일 날 역시 문체부가 윤석열차 논란으로 만화영상진흥원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합니다.

9월 21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응한다면서 인터넷언론사 심의를 해서 논란이 되었고요.

9월 25일에도 역시나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본감사 돌입하고 9월 25일에 네이버가 SNU 팩트체크 지원을 중단합니다. 가짜뉴스에 대응을 한다면서 사실상 그런 허위조작정

보들, 불법 정보들을 걸러 낼 수 있는 팩트체크 기관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 중단하고 폐쇄를 시키는 과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KBS·JTBC·YTN에 최고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하고요.

9월 26일에 방심위 가짜뉴스심의센터를 출범합니다.

27일에 방통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새로 출범을 시켰고요. 9월 27일 당일 법원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10월 10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심의 불가'에서 '가능'으로 자체 법무팀 검토의견을 번복하고요.

다음 날 11일에는 KBS 보궐이사로 광주 사태 관련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의결합니다. 당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야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서 현장조사를 하고요. 역시 당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정준희 교수와 민언련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또 당일 방심위가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를 최초로 심의합니다.

다음 날인 10월 12일 대법은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유죄를 확정하고요.

그리고 10월 13일 방심위에서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의결합니다.

10월 16일에는 뉴스타파를 인용한 MBC·JTBC 과징금 제재를 확정을 하고요.

다음 날 17일 윤 대통령은 박민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합니다.

18일 EBS 보궐이사로 미래한국당 공천을 탈락했던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임명하고요.

10월 20일에는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가짜뉴스 퇴치 플랫폼 구성을 천명합니다. 기존에 가짜뉴스를 걸러 내고자 했던 팩트체크 플랫폼들은 다 해체를 하고 새로운 가짜뉴스 퇴치 플랫폼 구성을 천명한 것이지요. 그리고 10월 20일 같은 날 KTV·KBS월드·아리랑TV 통합방안에 대한 내부 보고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당일 또 같은 날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정지 가처분이 기각됩니다.

10월 23일에는 유진그룹이 3199억 원으로 YTN을 최종 낙찰받았고요.

10월 24일에는 방심위 사무총장에 이현주 전 KBS대구방송총국장이 임명됩니다.

26일에는 검찰이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 보도를 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요.

며칠 뒤인 10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권 다수로 바뀌자 북한 민주노총 연대사 '해당 없음'을 '차단'으로 결정을 번복합니다.

10월 31일에 MBC 정부광고액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이지요, 11월 1일에는 역시 법원에서 방통위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회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또 11월 6일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정부비판 언론인 형사고소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1월 12일에는 박민 KBS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뉴스 앵커들이 줄줄이 하차하게 되고요. 11월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낙하산 의혹이 있는 박민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합니다.

11월 13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MBC 기자들을 고소하고요. 그리고 같은 날 방심위가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지요.

11월 14일에는 박민 KBS 사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편파 보도 기자·PD 즉각 업무 배제를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같은 날 박민 체제 KBS에서는 총선 보도 요직에 이명박·박근혜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기용합니다.

11월 15일에는 제22대 총선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백선기가 위촉이 됩니다. 같은 날 대구시에서는 비판언론 광고를 대폭 삭감하고 중단시켰고요.

11월 16일에는 방통위가 유진기업 접수 하루 만에 YTN 민영화 심사를 시작하고요. 같은 날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합니다.

11월 19일에는 법원에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5년 7개월 만에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11월 20일에는 KBS 수신료가 3개월간 83억이 덜 걷혔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11월 23일에는 여권이 불공정 낙인찍은 KBS 기자들이 시청자센터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4일에는 YTN 낙찰한 유진기업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고소하는 등 노조 탄압 논란이 일었고요. 같은 날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합니다.

11월 27일에는 TBS 민영화 추진이 공식화되고요. 29일에는 방통위가 뉴스타파 기자 취재 거부를 하고 퇴장 조치를 하기에 이릅니다.

12월 1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역시 또 즉시 윤석열, 면직안 재가합니다. 당일에 윤석열은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하지요.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 출신 술 친구인 김홍일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 지명합니다. 그 당일 검찰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이에 대해서 김용진 대표가 '정말 전례 없는 검찰 폭거다'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12월 7일에 대구MBC는 7개월째 취재 거부를 하는 홍준표 대구시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 이르고요.

12월 12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노동계 옹호 민원 MBC 라디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사실을 잘못 전한 TV조선을 오히려 문제없음을 의결합니다.

12월 20일에는 서울고법에서 2인 체제인 방통위의 처분 효력 유지·존속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21일에는 취임 후 2년 연속 방송의 날 기념행사에 불참한 윤석열, 보수 언론단체 시상식 축사는 전송을 했습니다.

22일에는 내년도—그다음 연도지요—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을 50억 원으로 대폭 삭감을 하고요.

12월 26일에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압수수색합니다. 같은 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 민원을 제기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신청 사주 의혹이 회의장에서 터지자 인용 보도를 금지하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12월 28일은 KBS 시사기획 창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에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 외교 홍보를 해서 논란이 일었고요.

다음 날인 29일에는 윤석열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30일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3개월간 방송사 과징금이 11건에 이르렀다, 정연주 전 위원장은 2년간 18건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3개월에 11건이었다는 그런, 집중적으로 방송사를 길들이고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2월 31일에는 방통위가 31일에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의결을 돌연 취소합니다.

여기까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윤 정부의 언론 장악과 탄압 과정이었고요.

그다음 또 2024년이 이어집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KBS에서는 전두환 호칭을 '씨'에서 '전 대통령'으로 하라는 강제 지침을 내려서 논란이 일었고요.

1월 8일에는 방심위가 윤석열 지각 체크 영상을 게시한 서울의소리 기자 유튜브를 접속 차단 조치했습니다.

1월 12일에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서 MBC의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고요. 당일에 방심위가 야권 추천위원 2인을 해촉 건의를 의결합니다.

1월 15일에는 경찰이 방심위 민원상담팀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요.

1월 17일에는 옥시찬·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을 윤 대통령 재가합니다.

1월 18일 방통위 문재인 정부 팩트체크 사업 기관장 경고 및 수사 요청에 들어가고요. 같은 날 KBS 직원 120여 명이 수신료 담당 파견 강제 발령 논란이 일었습니다.

1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정옥·문재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고요. 이때 여야가 6 대 1의 구조였습니다.

2월 2일에는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최영범 대통령실 전 홍보수석을 내정하고요.

2월 6일에는 윤석열이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설 명절에 사면합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방통위원회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하고요.

15일에는 KBS 제작본부장이 세월호 10주기 다큐인사이트가 총선에 영향을 준다면서 편성을 연기하고 아예 무산을 시켜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월 23일에는 방심위가 윤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의 접속을 차단했고요.

3월 4일에는 법원에서 해촉 부당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업무 배제가 지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월 7일에는 선방심위지요,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다룬 CBS를 행정처분을 하고요.

며칠 뒤인 11일에는 방심위 역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서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다음 날인 12일 KBS는 주진우의 출연금지를 결정하고요.

이틀 뒤인 14일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잘 들어' 하면서 언론인 회칼 테러 겁박을 해서 큰 논란이 일었었지요.

3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희화화했다면서 MBC 뉴스 하이킥을 선방위가 중징계합니다.

4월 1일에는 YTN 사장에 김백 취임하는데요. 대국민사과를 예고하지요. 그리고 같은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우파 중심 조직장악 대외비 문건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4월 4일에는 선방심위에서, MBC '미세먼지 1' 발언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숫자 1을 파란색으로 썼다고 해서 법정제재를 가하였습니다.

4월 16일에는 방심위에서 김건희 모녀 22억 수익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했다면서 YTN을 법정제재를 하고요.

4월 18일에는 선방심위에서 역시 윤 대통령 장모 삼일절 가석방 보도를 했다고 MBC를 중징계합니다. 가석방 보도에 대해서 MBC를 중징계하지요.

4월 23일에는 방심위가 MBC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에 대해서 역시 법정제재를 하고요.

30일에는 검찰이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해서 EBS를 압수수색합니다.

4월 달까지도 정말 이렇게 언론장악과 탄압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5월 3일에 국경없는기자회가 역시 한국 언론자유지수를 62위로 발표합니다. 지난해보다 또 하락한 수치지요.

5월 7일에는 경향신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잘려서 보도되자 대통령실이 항의전화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고요.

5월 10일에는 KBS '역사저널 그날'의 제작진이 MC 기용 외압 및 폐지를 고발합니다.

5월 16일에는 YTN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주 땡기네' 돌발영상을 삭제해서 파문이 일었고요.

25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2인 체제 방통위를 엄호하기 시작합니다.

5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합헌 결정을 하고요.

6월 3일에는 방송 3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6월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하고요.

7월 2일에는 또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합니다.

7월 4일에 이진숙 전 대전MBC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지명이 되고요.

7월 17일에는 KBS 시사교양국 보도본부 이관되고 조직개편이 추진됩니다.

7월 2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 3명을 위촉하는데요. 김정수, 류희림, 강경필이었습니다. 당일 차기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밀실 연임 결정이 됩니다.

7월 24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26일까지 이어졌고요.

25일에 야 6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6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당일 날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과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 6일에 야당은 공영방송의 불법적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8월 9일에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불법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1차 청문회가 있었고 2차 청문회는 14일, 3차는 21일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윤석열이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당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으로 김문환, 백선기, 임정열을 임명합니다.

다음 날인 8월 13일 국민의힘은 포털 불공정 개혁 테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KBS에서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송출하고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하는 영상인 '기적의 시작'을 방영해서 역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8월 26일에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합니다.

9월 10일에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서 방심위 사무실 직원 자택, 노조 사무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9월 11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유일의 지역 공영방송인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합니다.

9월 26일에는 방송 4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역시 또 무산이 됩니다.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녹취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했고요.

10월 10일에는 윤석열 정권 아래 언론장악 카르텔로 부상한 공언련 비호 아래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선임이 됩니다.

15일에는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었던 서울시와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10월 17일에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대해서 1500만 원 과

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결을 하지요.

그리고 10월 23일 KBS이사회의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KBS 사장후보로 최종 선임합니다.

10월 24일 그다음 날은 KBS 이사 4인이 박장범 사장후보자 임명 제청하고 사장후보자 박장범 직무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11월 1일 서울고법은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1심을 불복하고 제기한 항고를 역시 기각합니다.

11월 3일에는 윤석열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 날인 4일은 3인 체제인 6기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합니다.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1차 심리를 하고, 11월 18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 1차 청문회가 또 역시 한 3일간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19일에는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에 용산대통령실 KBS 사장 교체 통보 의혹을 제기해서 파문이 일었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중에 사장 교체 통보 의혹 관련해서 그런 보도 파문이 일었다는 것이고요.

11월 20일에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부산일보 기자 사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일지를 집권 초반부터 2024년 11월 말 정도까지의 상황을 한번 죽 같이 훑어봤고요. 이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방위적으로 하루를 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했던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다 살펴보셨을 것 같고요. KBS 자체에 대해서 장악해 왔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안에 있는 내용이라서 우선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윤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해서 민언련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후반기 공영방송 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자료집에서 정리된 일지를 한번 죽 살펴보았습니다.

(「힘들면 그만해도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끝나지 않고요.

(「힘들면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부의장님,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힘드시면 그만해도 돼. 여기 할 사람 많아」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의원님 괜찮습니다.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쭉 한번 우리 언론개혁의 역사, 과정, 후퇴와 전진의 과정을 조망해 봤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행되었던 언론의 탄압과 장악의 역사를 정말 하나하나 기록된 자료를 통해서 날짜별로 쭉 살펴보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고 그 외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미디어 거버넌스를 올바르게 구축하는 구조개혁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5G·6G 무선통신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등 최첨단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에서 방송과 통신을 관리하는 문제 또 중복규제, 규제 사각지대 해소하는 문제 이런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 공백으로 인해서 현재 불법 유해 콘텐츠들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일컬어지는 각종 논란이 있는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노력을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역사 속에서 대신 좀 기울였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한번 방송·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참고해서 드릴 말씀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올해 8월 19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고 기타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우리 미디어 환경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미디어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가 역시 올해 7월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연속토론회 발제문인데요. 이진순 민언련 이사,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발제한 발제문입니다. '국민주권정부 미디어기구 개편의 전환적 패러다임—미디어 공공성과 시민권리 관점에서 본 기존 논의 분석'이라는 발제문입니다.

이 두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미디어기구 개편,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자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자료집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통치체제의 변화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미디어 관리감독업무 범위가 대폭 확장되어 왔습니다. 통합적 미디어 법제와 관리감독기구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김대중 정부 이후의 일관된 문제의식입니다. 미디어 관리감독기구의 법적 지위는 행정부 산하 단순 자문위원회 수준에서 김대중 정부의 무소속 독립형 합의제 위원회로 위상이 변했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정보자본의 시장 지배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융합이 폭발적인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각국 정부는 정보산업 독과점과 공론장 파괴 등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처하고 이용자 권리와 건강한 공론장 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또 거버넌스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미디어는 왜 공익적이어야 하는가. 주지하듯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방송·미디어가 1980년대 후반까지 정부의 공보정책에 귀속되었다가 1990년대 이후에 산업부양정책, 문화산업정책 영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논의는 공보정책과 산업정책, 영상문화정책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통합방송위원회 등장 이후에 방송·미디어 관련 논의와 논쟁의 근본적인 배경은 공

공정책 패러다임과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있기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오며 가며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성, 그 갈등과 변주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주의를 계승해야 되는 공익론의 관점에서는 방송의 공익을 인간다움과 도덕적 삶의 토대로 강조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요, 방송이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에 반해서 산업론—즉 시장자유주의의 계승론의 입장인데요—이 관점에서는 방송을 시장경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공익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의 국내 미디어정책은 우선 첫 번째로 공익정책 모델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방송정책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모델이 관철된 결과, 통합방송위원회와 이를 확대·재편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이 기구들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정책 모델도 펼쳤습니다. IPTV 이전까지는 주로 새로운 미디어 도입 정책과 관련이 있었는데 IPTV와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수평적 규제체제의 구축 논의가 주요한 주장으로 대두됩니다. 시장 내 공정 경쟁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고요. 이는 방송·미디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강조하는 산업론적 관점에서 비롯된 모델입니다.

현재 국내 방송·영상·미디어 문제의 핵심은 그 공적 성격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채널 미디어 확산 이후 새로운 미디어의 지속적인 등장과 영향력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시장의 공공성을 지켜오던 공영미디어들조차 그 공적 성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한다고 이 발제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고 순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좀 볼 만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2000년 3월 방송법 개정으로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했지요. 이 통합방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공보처가 폐지되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통합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허가, 방송프로그램 심의 등 방송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권한들이 쭉 있는데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이사 선임 권한도 가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00년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방송 민주화의 산물이었습니다. 방송이 종전의 독임제 정부기구인 공보처 또는 문화공보부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로 이관되었다는 점에서 방송의 민주화가 큰 걸음을 내디뎠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9인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받아서 임명되었고 위원장은 국회와 국무회의에 출석할 권한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처럼 통합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과 행정을 통합 관리하는 최초의 민간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방송광고정책과 방송진흥정책의 일부 권한이 여전히 문화관광부에 남아 있어서 업무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민간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취약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통합방송위원회의 직무와 위상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법을 개혁한다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해서 이후 한국 방송의 제도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주도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추진했고 영화 등급보류제를 폐지해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를 지켜서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했습니다.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한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의 융합추진위원회, 2006년인데요. 그 이후의 사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현상과 융합형 미디어에 대한 정책, 또 규제 문제를 놓고서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와 통신 규제부처인 정보통신부 간에 관할권 문제를 놓고 많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 이들 양 기관과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도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6년 7월 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해서 4개월 가까운 작업 끝에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즉 위원회를 설치하되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송통신 내용, 윤리 등 심의기구는 민간기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정책 목표였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호 이외에도 방송통신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경쟁 환경의 조성 등 새로

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통합 관장은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관련 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종편이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데요.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이 부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을 대부분 이관받아서 과학기술 정책, ICT 관련 업무, 방송통신 진흥 및 전파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었겠지요.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편은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미래부가 진흥정책을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그 부처명만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롭게 출범했지요. 이 부처는 미래부의 기능 대부분을 승계하면서도 부처 명칭에서 '창조경제'를 삭제하고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를 다시 포함시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리했던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 기능을 다시 통합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진흥 기능을 또 방통위가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무정책 그리고 방통위가 무력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요지만 간단하게 좀 보자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검찰 출신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운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고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지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독립적인 심의기구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방송탄압 도구로 방통위 또는 방심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 정부가 끝나고, 초유의 계엄 사태, 내란 사태로 인해서 윤 정부가 종식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기구의 재편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방미통위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2021년 국회 과방위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하나의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은데 수평적 규제체제를 위한 법 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제언을 합니다.

‘기존의 방송통신정책은 방송의 공공성을, 통신의 산업성을 강조하며 두 가치를 분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는 시청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동시에 시장 성공으로 이어지는 등 공공성과 산업성이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 가치를 선택하기보다 두 가치를 조화롭게 육성해서 산업 성장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의 미디어 규제는 사업자, 네트워크, 서비스가 수직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중복 규제나 규제 공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PTV와 OTT 서비스 등은 기존 규제체계와 충돌하면서 법적 지위가 모호해서 동일 서비스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했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디어 산업을 기능에 따라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층위로 나누고 동일 층위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곧 의결하게 될 방미통위법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 미디어 거버넌스의 개편 과정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면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어떤 체제를, 정책을, 구조를 좀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또 내 주셨는데요. 생성형 AI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낭독형으로 좀 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디어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 유료 다채널 방송이 나왔을 때, 융합 미디어인 IPTV가 상용화되었을 때, 또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을 때 국내 미디어나 미디어 시장은 엄청난 무질서가 초래되어 곧 파국을 맞게 될 것처럼 이야기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누적되어 온 방송·미디어 정책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는 없다.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후속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통위의 정상화는 왜곡될 대로 왜곡된 미디어 시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방송·미디어 영역에서 공공성·공익성이 구체적 법안이 되어 실효성을 갖게 된 것은 주지하듯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방송·미디어 관련 논의는 공공성·공익성을 축소하려는 권력·시장의 보이는 어깨와 공공성·공익성을 지키고자 하는 범시민사회 진영의 배수진 사이를 요동했다고 생각한다.

공익정책 패러다임의 산물인 방송위원회에서 통합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힘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방송이 정보의 공보기관이라는 오랜 역사를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논의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급하게 정상화해야 하는 핵심 이유도 합의제의 복원이라고 본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투명하게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통위의 정상화, 방통위의 정상화 더하기 새로운 미디어 시장과 미디어 환경에 맞는 형태로 우리 공공성과 공익성에 맞는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문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절박함을 잘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찬성토론에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자료는 사실 좀 비슷한 취지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도 사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시간이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그 발제문 읽어 보겠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의 미디어 거버넌스 변천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발제문과 좀 비슷한 취지이고요. 그 외에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조직개편안의 담론에 대해서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구 개편의 시대정신과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산업 관계자나 부처별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직 그림표를 이리저리 뜯어 맞추고 재조립하기에 앞서서 기구 개편의 시대적 의미와 입법 취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존 개편 논의의 기초를 이룬 담론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첫 번째 Q로 '언론과 문화는 산업인가, 기본권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제문에도 양대 담론의 축을 소개했는데 이 취지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언론과 문화는 산업이기에 앞서 국민의 기본권이다. 교육이 산업이기에 앞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공적 책무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언론과 문화의 핵심 가치는 다양성과 자율성이다. 국가 주도의 산업적 지원책이 바람직한 언론과 문화의 진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문화연대는 정부 주도의 K-컬처 지원사업이 관료 카르텔을 강화하여 문화 현장 전반의 하청 계열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파괴와 지역문화 배제 등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을 억압하여 문화 현장과 공공정책은 이미 텅 빈 폐허가 되었다고 정부 주도 산업 진흥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 미디어 산업의 위기에만 주목해서 보자면 미디어의 공공재적 역할과 시민 이용자들의 기본권으로서의 미디어 주권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혐오와 적대, 불법 성폭력 콘텐츠 시장 등은 상업적으로 급성장하고 건강한 공론장으로서의 미디어 기능은 위축되는 현실에서 시장주의적 해법으로는 현재 미디어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Q로서 '정치의 과잉인가, 정치의 결핍인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고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언젠가부터 정치의 과잉, 과잉 정치화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쓰고 있다. 정치 과잉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쟁과 설득과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 내는 과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인 방통위의 파행은 정치 과잉이 아니라 정치의 결핍에서 비롯된 정치적 종속이 오히려 문제였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언론장악의 첨병이 되고 국란을 자초한 일은 협치와 민관 거버넌스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루지 못하고 형식은 합의제이지만 대통령의 하수인에 의한

독임제처럼 운영된 탓이 크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가 1기 최시중 위원장 때부터 무늬만 합의제인 실질적 독임제였다는 비판이 컸다. 대통령 직속이 아닌 무소속의 독립적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안, 방통위원의 추천과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전문가 위원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 합의제를 합의제답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취지가 이번에 저희 방송 3법 등에 적극적으로 계속 또 담겨 가고 있습니다.

'독임제는 지난 시기 수많은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기울여 온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매우 경계해야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세 번째 Q로는 '규제와 진흥은 길항 관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또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의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흥은 독임제 부처에서, 규제는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한다는 방식의 이원론은 현실적이지 않다. 진흥과 규제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며 병존하는 것이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산업적 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정보통신 자본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독과점을 이루는 시기에는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유럽연합이 2022년부터 디지털시장법—DMA라고 하지요—을 통해 빅테크 자본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중소 규모 미디어의 시장 진입 문호를 넓히는 것은 더 높은 산업경쟁력을 가지기 위함이다. 규제=산업위축, 탈규제=산업진흥의 이분법적 관점은 미디어 시장의 왜곡과 대자본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이 DMA와 함께 또 같이 도입된 DSA라고 해서 디지털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또 제가 다음 파트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Q로 '중복 규제가 문제인가, 규제의 공백이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데요. 답을 보지요.

'매체별 기계적 분류에 의한 부처 간 업무 분장으로 중복 규제와 관리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은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복 규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의 사각지대, 규제의 공백으로 인한 불법·유해 콘텐츠의 확산이다.

글로벌 OTT와 소셜미디어의 시장 지배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위축되니 국내 미디어 시장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미디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유럽연합처럼 디지털서비스법—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SA입니다—을 제정해서 국내에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의 규제를 철폐할 것이 아니라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지 못해서 초래되는 모든 피해의 당사자는 바로 이용자 시민들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민주권정부 미디어기구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한번 제언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구조개편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디지털 융합시대에 미디어는 단순한 보도 기능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제한되지 않는다. 미디어는 교육과 취업과 금융과 소비와 일상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삶의 기본 인프라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이 시민의 기본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공공성과 독립성, 다양성 확립,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가 그래서 필요하다.

단 합의제다운 합의제, 독립부처다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

독임제와 행정부 산하 최소 규모의 공영미디어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시대정신에 역행한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이용자 권리 중심의 조직개편이 구상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DSA와 브뤼셀 효과 이런 것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참고 내용이고 이따가 역시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DSA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번 이렇게 쭉 우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그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 거버넌스 재편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것을 둘러싼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오는 합의제 기구의 변천사도 한번 같이 조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발의되어 있는,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방미통위법의 경우에는 이런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기구의 변천사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멈출 수 없는, 특히나 윤 정부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히려 논의가 진척되기는커녕 더욱더 후퇴했던 미디어 정책과 구조개편 정책을 다시 시급하게 정상화하고 진척시키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전문가들의 제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시민사회 또 전문가, 다양한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새로운 변화 환경에 맞는 미디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제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럽의 DSA를 한국의 현실에 맞춰서 한국판 DSA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이후에 또 큰 덩어리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DSA, 최근에 저희가 언론개혁 과제를 민주당에서 추진하면서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는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적인 한국판 DSA의 대략적인 얼개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의 규제 사례들을 DSA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고자 하거든요.

이미 2022년부터 시작된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에서, 법무부 또 국회 도서관 등

등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 우리 기관들에서도 상당히 양질의 분석 자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시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이버상에서 정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소위 사이버렉카 문제 또 혐오 표현의 문제 그리고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유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특히 유튜브나 대형 정보통신 서비스가 활황기에 접어들면서 정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유통 속도와 유통량이 어마어마하게 증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양질의 우수한 또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할 수 있는 왜곡된 정보라든지 말씀드렸던 허위정보라든지 때로는 또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해서 타인을 정말 해하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유포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또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이 왜 필요한가 이런 주제를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입법조사처의 자료는 2024년 10월 21일에 발간되었고요. '사이버렉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최진응 입법조사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정말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들 정말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으나 그것이 진짜 구체적인 현황이 어떤지,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상세하게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렉카 문제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한번 제가 이거 좀 쭉 읽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소셜미디어인 유튜브의 이용은 매우 높은 수준인데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유튜브 사용자 수, 즉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기준입니다, 이것이 약 4565만 명으로 카카오톡의 약 4554만 명을 추월해서 국내 제1위의 앱서비스로 올라섰고, 2024년 1월 기준으로 1인당 유튜브 사용시간도 모바일 기준 월평균 약 40시간으로 전 세계 평균 시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유튜브에 대한 국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위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의 채널 시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

사이버렉카라는 용어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에 신속히 이동하여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이슈를 가져와 짜깁기 형태의 콘텐츠를 게시하여 금전적 수익을 얻는 자를 의미한다.

사이버렉카는 카더라식의 근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해 빠르게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를 언론사가 정확한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이슈를 확대·재생산하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사이버렉카에 의한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및

공갈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들 사이버렉카는 공공의 이익, 공적 관심사, 국민의 알권리 등을 명분으로 하여 자신의 콘텐츠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렉카 문제는 미디어의 상업성이 어떻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사이버렉카는 유명 정치인·연예인·스포츠선수 외에도 인플루언서,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여 사생활 노출, 허위사실 폭로,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및 협박, 음모론 등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도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나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른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이버렉카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사이버렉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사이버렉카의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강화, 사이버렉카가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책임 강화 등에 대해 다양한 법적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별 법적 개선 방안의 타당성과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찾아 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이버렉카 관련 국내 법제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해외에서는 이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EU, 영국, 호주, 중국의 법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사점을 분석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시사점에 기반해서 국내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렉카 관련 국내 법제 현황과 한계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현황입니다.

형사적인 규제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이라고 축약해서 부르지요—제70조에 근거해서 사이버렉카가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보다 가중하여 형사처벌한다. 특히 정통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높은 형량의 형벌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법상의 협박죄·공갈죄입니다.

형법 제283조에 근거하여 사이버렉카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 특정인을 협박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동법 제350조에 근거하여 사이버렉카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 범죄수익 몰수와 관련한 것인데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로 형성된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지요. 중대범죄란 재산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범죄로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중대범죄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이버렉카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공갈죄를 지으면 범죄로 생긴 재산은 당연히 현행법상으로도 몰수 대상이 된다.

이제 큰 두 번째로, 형사적인 규제 다음으로 행정적 규제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시 조치인데요.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사이버렉카 채널에서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온라인 플랫폼에게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은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조치 사실을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삭제 요청이 있었으나 권리침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를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이 상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에 근거해서 사이버렉카의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거나 불법에 이르지 않지만 유해정보일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후에 온라인 플랫폼에게 삭제·차단·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역시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인데요. 역시 같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 따라서 사이버렉카 채널에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차단·이용해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점층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요, 현행법이.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느끼셨다시피 지금 현행 제도의 한계도 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내용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적 규제의 경우 엄격한 법적 구성요건을 갖춰야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다. 주요 범죄인 명예훼손죄·공갈죄·협박죄 각각의 위법성 구성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처벌이 되지만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 조각’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처벌 대상이긴 하나 위법성을 없애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둘째, 공갈죄의 경우 재물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 행위가 있고 이러한 공갈 행위가 실제 피해자의 재물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공여 행위와 연계된 경우 처벌된다.

셋째,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면 범죄행위인 협박에 해당한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이 내용에서 사실상 그 한계가 또 드러나는데요.

따라서 사이버렉카의 게시물에 대해 공공의 알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협박의 내용이 공포심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처럼 사이버렉카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 불안,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엄격한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형사적 규제로서 범죄수익 몰수의 경우 사이버렉카의 범죄 유형은 다양하고 이 중 장기 3년 이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몰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사 중대범죄로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범죄와 그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1인 미디어 채널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고 한 개의 콘텐츠 내에서도 합법 및 불법적 콘텐츠가 혼재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범죄행위에 기반한 직접적 수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규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튜브와 같은 해외 서비스는 본국—즉 미국이지요—의 법률의 관할하에 있다는 입장으로 국내법을 적용한다 해도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게시물 삭제 등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제도 및 규제기관의 시정요구나 시정명령제도와 같은 국내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서버가 국내에 없는 유튜브는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국내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가이드라인에 합치될 경우에 주로 삭제, 차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행정규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와 연관된 규제로서 범죄행위에 연루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이런 한계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해외 법들에서는 어떤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는지 또 이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한계들, 현행법상의 한계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언론개혁특위에서는 이런 한계들을 좀 보완해서 시급하게 시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한국판 DSA를 만드는 그 과제와 별개로 조금 더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안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서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현행법상으로 규제의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해외에서는 과연 사이버렉카와 관련해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그 규제 법안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EU, 영국, 호주 등에서는 사이버렉카를 특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고 온라인상의 행위가 불법이거나 유해할 경우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인기 유발이나 트래픽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불법·유해 정보의 근절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처지가 좀 다르겠지요.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이주희 의원 예.

○부의장 이학영 지금 방청석에 유상범 의원실 소개로 횡성인재육성관 학생 32명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주희 의원 환영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음에 이양수 의원실 소개로 인제교육지원청 학생 26명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주희 의원 환영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좋은 방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주희 의원 감사합니다.

좀 거리가 멀고 제가 요새 눈이 조금 나빠져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상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필 또 오늘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는 중에 이렇게 방청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이후 제가 이번에 발제하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유튜브나 각종 온라인 플랫폼, 포털 등에 만연해 있는 타인을 해하는 소위 나쁜 정보들에 대해서는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자율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영하고요.

계속 또 이어 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서비스 액트(Digital Services Act), 약어로 DSA라고 부르는데요. DSA로 제가 통칭을 하겠습니다.

EU는 DSA를 제정하고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구조적 위험에 포함해서 최소 연 1회의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구조적 위험에 대한 완화 조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의 완화 조치에는 위험 콘텐츠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이용약관 조정,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접근 배제, 이용자 계정 해지·정지, 이용자 수익 창출 정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튜브상에서 떠도는 ‘이런 것 좀 심각하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정보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얘기를 들어 주시면 더 생생하게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연 1회 자신의 비용으로 동법 의무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며 신고된 콘텐츠의 조치 내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표해야 한다. 동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즉 온라인 플랫폼, 우리로 치면 유튜브 자체가 자신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심의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투명성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규제적 자율규제라고 하는 이 자율규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라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EU 회원국 중 독일은 EU의 DSA 제정 이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네트워크 집행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 네트워크 집행법은 EU의 DSA 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트워크 집행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특정해서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면 신속히 삭제하고 이러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즉 용이한 신고 절차 마련, 신속한 불법 정보 삭제, 삭제 콘텐츠에 대한 증거 보존, 삭제 시 피해자에 통지 또 조치 내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 이러한 다양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간 불법 정보 삭제에 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장시간 찬성토론을 하는데 그 논의의 흐름,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관련한, 방미통위법 설치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토론을 하는 중이고요. 그 찬성토론의 이유를 지금 한 다섯 시간 이상을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 법안이 오기까지 우리 언론의 개혁과 부침의 역사 또 언론 탄압과 성장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쭉 한번 조망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방송·통신·미디어 거버넌스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정책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현실이 어떠하고 그 현실에 맞게끔,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데 그 법안이 해외에서는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간에 들어오셔서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영국은 2023년에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해서 온라인상 폭력행위에 기반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이용자 간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이용자 간 서비스에게 불법 정보 유통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불법 정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걸쳐 마련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알고리즘 설계, 이용약관 정책, 정보 삭제 및 차단 등의 콘텐츠 관리·접근 정책, 이용자의 콘텐츠 제어 기능 제공 등에서 콘텐츠의 위험을 완화·관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에서는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 간 서비스에는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젠더에 대한 악의적인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성인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부가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이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콘텐츠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러한 제어 서비스의 운용에 대해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콘텐츠로부터 접근 가능성을 줄이거나 이런 콘텐츠가 유통될 경우 사전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콘텐츠 제어 기능이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불법적인 정보일 경우에는 그 영상의 하단에 문제 있는 정보라는 표시를 한다는 그런 취지겠지요.

나아가 이용자에게 필터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인증되지 않은 자와의 상호 접근을 차단하고 인증되지 않은 자가 제작·유통·공유하는 콘텐츠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야 한다.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안전법에 근거한 조치 내역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무 기관인 오프컴(Ofcom)에 제출해야 하며 오프컴은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영국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취지고요.

세 번째로는 한번 호주 온라인 안전법을 살펴볼까요? 호주는 영국과 조금 비슷한 취지이기는 한데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온라인 플랫폼에게 유통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이 법상 사이버폭력정보란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로서 성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있고 위협·괴롭힘·공격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차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 내에 삭제되지 않은 경우 디지털안전국에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안전국이 사이버폭력정보로 판정한 경우 이 정보에 대해 디지털안전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안전법에서는 성명서 형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디지털안전국은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사이버폭력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이 이 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약관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 성명서를 공표할 수 있다.

나아가 주무 장관은 법령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사용을 위한 사업자 조치, 사이버폭력 등 불법 정보 유통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 조치, 사업자의 약관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이의 제기 시스템 보장 등을 위한 온라인안전기본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안전기본요건을 위반한 사업자의 위반 사실에 대해 성명서를 공표할 수 있다.

이상이 주요 유럽 내지는 서구의 정책들이었고요.

그 이후 중국을 한번 볼 텐데 예상하시다시피 중국은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아까 제가 소속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주희 국회의원이고요. 향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중국은 온라인폭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별도의 온라인폭력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에서 온라인폭력정보란 인터넷상 개인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로서 구체적으로는 명예훼손, 유언비어, 모욕, 사생활 침해, 강요, 비난과 조롱, 증오 선동, 경멸적인 차별, 기타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포함된다. 이용자는 온라인폭력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인기 유발, 트래픽 촉진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폭력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 한국 부천역 인근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불법적인 행동 또 타인을 가해하는 표현과 행동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과방위 소속으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은 경고, 정보 삭제, 개정 제한, 폐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온라인폭력정보의 유통을 조직화·선동·반복하여 게시할 경우 이용자에게 등록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폭력 관련 범죄에 연루된 누구라도 이들에 대해 기술, 데이터, 트래픽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폭력정보 유통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신원정보를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폭력정보의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온라인폭력정보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즉시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관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는 댓글 사용금지, 콘텐츠 공개범위, 이용자 접근차단 등 옵션을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폭력정보를 발견했을 때 그 자료를 즉시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도 온라인폭력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폭력정보와 관련한 민원 및 신고시스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에 이 조항들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법령이 없을 경우 정부 부처는 시정명령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폭력정보의 제작·유포 등을 조직적으로 선동하거나 온라인폭력정보를 통해 악의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죽 한번 해외의 법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법규들을 통한 시사점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격적 콘텐츠 유포와 이로 인한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외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제도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 주요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폭력정보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중국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온라인폭력정보의 용어와 그 정의를 적시하고 있다. 다만 사례별로 온라인폭력정보를 기존 온라인 콘텐츠 규제체제하에서 포섭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규제체제로 분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규제체제는 차이가 있다. 즉 EU·영국·호주의 경우에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통합적인 콘텐츠 규제체제 내에서 온라인폭력을 포섭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반적인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콘텐츠 규제 외에 온라인폭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폭력정보 유통에 대해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U·영국·호주·중국은 공통적으로 이용자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EU와 영국은 사업자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종국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반면, 호주와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일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콘텐츠 삭제 등 조치 시 이의제기를 보장하는 규정과 의무 불이행 시 성명서 공표 등과 같은 형태로 민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향후 법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온라인폭력에 대한 플랫폼의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폭력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로 정보의 삭제·차단뿐만 아니라 이용정지·해지, 수익창출금지 등을 적시하고 있다. 다만 EU·영국·호주는 해당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중국은 해당 플랫폼 내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온라인폭력 전반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 플랫폼이 등록금지 등과 같이 일체의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강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용자가 온라인폭력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 제공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하기도 한다. 영국과 중국은 온라인폭력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제작한 콘텐츠와의 상호접촉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어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한국판 DSA 꼭 마련하겠다 의지를 밝혔었는데요. 그 한국판 DSA에서 바로 이런 해외의 규제 사례들을,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의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담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사이버렉카의 규제 방안으로서 우리 법제의 현실을 놓고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이 보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앞서 본 해외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기계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국가 간 규제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EU나 영국 등 유럽권 국가와는 달리 민간의 플랫폼이 아닌 행정기관이 직접 정보 삭제 및 이용자 제재 등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EU나 유럽 방식으로 플랫폼 중심의 규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현행 행정기관 중심의 국내 콘텐츠 규제시스템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의견 제기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의 규제를 민간 중심으로 많은 부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방안으로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국회에서 또 제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와 유사하게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높은 호주나 중국의 법제도 세부적으로는 우리와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영미법계 국가인 호주의 경우 연방법에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한 사이버폭력 정보를 새롭게 도입하여 기존 법적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

라는 이미 명예훼손죄가 형사법 내 규율되어 있어 별도의 사이버폭력 정보를 형사법이나 기존 콘텐츠 규제 내에 도입할 경우 중복 규제의 문제가 있다. 반면 중국은 우리와 같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 규정은 있음에도 별도의 온라인 폭력 개념을 도입하고 악의적 목적의 온라인 폭력을 가중처벌하고 온라인 폭력에 대한 강한 플랫폼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와 인터넷 환경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진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어떤 중복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에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적용에 차등을 주는 법 적용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적절하게 조화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국내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현행 국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외 제도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 신설, 온라인 플랫폼의 선제적 대응, 규제기관의 사후 규제 신설 등이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안을 또 마련해 가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이버렉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법률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공격으로 인한 정서적인 가해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도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사이버폭력을 명시하여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생 대상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엄격한 형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개별법상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 비난 또는 협박 등 공격행위 등에 대해서 사이버폭력으로 포괄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또 해 주시는 거고요.

둘째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은 형사처벌의 신설이 아닌 플랫폼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저와 또 민주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라는 말씀도 아까 드렸습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 일시적인 정책적 목적으로 형사적으로 중형을 규정할 경우 전체 형법과의 조화가 깨질 수 있으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형사상 요건을 적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행하는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법에서는 이미 사이버폭력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등 기존 형사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렉카에 대한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이들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입니다. 사이버렉카 대응 차원에서 플랫폼의 규제는 현행 플랫폼 규제시스템의 체

계성을 유지하되 기존 제도로 편입시키기보다 별도의 방식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내의 플랫폼 규제시스템에 사이버폭력 행위를 편입할 경우에는 개별법상의 다양한 범죄정보에 대한 규제와 중복될 수 있고 또 플랫폼의 적극적인 정보 삭제 및 차단 등의 의무는 디지털 성범죄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일반적인 사이버폭력까지 확대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국내의 임시조치제도와 같은 자율규제방식에 편입할 경우에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내의 기존 플랫폼 규제는 주로 콘텐츠 삭제·차단 및 이용해지 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과 연계된 수익 창출, 사이버폭력에 연루된 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노출 방지 등이 현행법 체계로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넷째, 사이버렉카 대응 차원에서 별도의 규정 마련 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되 미이행 시 규제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조항은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신고된 사이버폭력 정보의 삭제·차단, 수익 창출 제한, 이용 정지 및 해지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차적으로 규제기관이 플랫폼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온라인 플랫폼에게 사이버폭력 정보 처리를 위한 용이한 신고 및 이의제기 절차, 사이버폭력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필터링 등 제어서비스 제공,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에 대한 요건을 약관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했을 때 규제기관의 대외적 성명서 발표 등과 같은 형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발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사이버렉카라는 사실상 범죄 또는 범죄에 근접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내법과 해외법을 비교 분석하면서 제언을 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고요. 지금 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또 다양한 다른 연구서들을 참조해서 이후에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법제를 국회에서 마련해 가야 한다는 그 필요성 아까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문제는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죽음 등의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는 주로 형사법 강화 또는 인터넷실명제 실시 등의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적 문제 그리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어려움에 부딪혀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소셜미디어 환경하에 사이버렉카의 사례는 오늘날 사이버폭력 문제가 하나의 상업적 비즈니스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 만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제적으로는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입법조사처의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한 법제 제언 이런 내용들을 한번 죽 살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5시간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미통위법 찬성토론을 하면서 쭉 우리 언론개혁의 역사, 언론탄압과 또 그 부침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충실하게 그 역대 정권들을 훑으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된 환경 속에 미디어 환경이 나날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윤 정부도 그러했고 이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형태로 미디어 거버넌스를 제대로 개편하지 못해 왔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에 맞는, 급격한 변화에 걸맞은 형태의 조직 구조가 필요하고 바로 그를 위해서 이번에 방미통위법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에 충분하게 우리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형태의 법제들을 국회에서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차원으로 지금 특히나 최근에 유튜브 내지는 포털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침해 사례들, 불법·허위조작 정보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기에 이 안들을 구조적인 개편 논의와 함께 내용적인 개편 논의도 이제 시작해야 된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한 법적 제언 이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이후 방송미디어 현실 개편 더하기 실질적인 내용의 개편의 일환으로 역시 중장기적으로 지금 한국판 DSA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DSA법에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현재 해외의 규제 사례들을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길게 되다 보니 중간에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그 앞선 논의를 잘 따라오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치적인 문제로 대혼란을 겪으면서 언론개혁 과제, 방송미디어 구조개혁 과제의 진척을 전혀 못 보고 있었던 그 와중에도 적어도 우리 정부기관들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외 입법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상당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이 논란을 멈추고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제대로 된 방송미디어위원회와 함께, 그 합의제 행정기구와 함께 향후에 우리 규제환경의 진척을 위한 법적 논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제도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그 관련한 내용을 좀 볼까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제가 사적인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올라오기 전보다 훨씬 더 기운이 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적절하게 향후 순번이신 다른 분께 양보를 해 드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은 진행을 한번 쭉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니까요 한번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프리미엄 리포트인데요. 이 논문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사점들을 주었습니다. 이 안은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DSA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분석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조문들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저희가 한국판 DSA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저도 꼼꼼히 읽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모두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그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요약문과 몇 가지, 서론 정도 그리고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김현수 연구위원과 또 마찬가지 연구위원인 전성호 연구위원께서 마련하신 리포트고요. 제목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사업자의 책임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EU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 형식으로 제안하였다.

동 법안은 플랫폼의 운영방식 전반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온라인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한 점이 의미가 있다.

같은 날 제안된 디지털시장법, 아까 약어로 DMA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제안된 디지털시장법과 더불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권한 및 관련 설명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플랫폼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불법 콘텐츠 억제를 위한 규제 중에서는 플랫폼을 오용시키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단을 의무화한 점이 의미가 있다. 불법 콘텐츠 삭제, 접속차단 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일회성 규제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플랫폼상에서의 이용자의 활동 특히 경제적 수익 활동을 제한하는 이러한 규제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법 콘텐츠 신고·삭제와 콘텐츠가 삭제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한 점도 눈에 띈다. 약관에 콘텐츠 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 및 수단을 명시하도록 하고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 법정 외 분쟁 해결 등 실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상이 이 리포트에서 말하는 요약문이고요. 대략 이 요약문만 들어도 어떤 취지의 내용으로 DSA가 구성되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리포트의 서론과 디지털서비스법 주요 내용을 보면서 개괄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법제에서 이런 형태의 전면적인 자율규제 내지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형태의 법안들이 아주 충분히 무르익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변호사 시절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조만간, 제가 중장기적이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이 형태로 우리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마련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또 계속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론인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짧지만 또 한번 볼게요.

2020년 12월 15일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사업자의 책임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DSA를 EU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레귤레이션(regulation), 규칙 형식으로 제안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체계는 2000년 전자상거래 지침 채택 이후 2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탄생,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대두, 불법 콘텐츠 등장 등 디지털 환경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에 대응한 현대적 법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과 너무나 동일하지요?

이에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소비자의 기본권 보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높은 투명성과 명확한 책임 프레임워크 구축 및 EU 단일시장 내 혁신, 성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법상의 의무는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앞의 서비스는 뒤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뒤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의무가 적용된다. 이렇게 법을 효율적으로 성안을 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공유경제 플랫폼,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EU 인구의 10%, 약 4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DSA에 대해서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살피는데, 이게 사실 정말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 리포트 소개하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또 필요하다면 관심 있는 국민들께서도 이 리포트 꼼꼼하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잠깐만……

그 구체적인 조문은 시간이 남으면 또 읽는 것으로 미루어 두고요. EU의 DSA에 대해서 재밌게 서술한, 평가한 글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그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글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규제냐, 자율이냐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박찬경 경북대학교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라는 코너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역시나 DSA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글로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믿게 되는 바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혹시 이를 결정하는 자들이 악한이거나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은 모든 시민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 정치적 결정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특성상 사라지지 않는 의혹이다. 그 최근 판본 중 하나는 모종의 세력이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도구를 독차지하고 우리를 세뇌하려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모종의 권력이 알고리즘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은 종종 알고리즘이라는 권력수단의 박탈 또는 알고리즘의 폐지라는 단순한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알고리즘 권력의 소유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공정위가 발견했듯 네이버가 뉴스, 동영상 추천을 조작하는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의 뉴스 배열을 금지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단순히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닌 구글이라는 더 큰 권력에게 옮겨 갈지 모른다. 만약 포털의 권력을 공공 뉴스 포털로 대체한다면 그곳 역시 배열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즉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권력은 수많은 행위자들이 나눠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빼앗

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아닐 공산이 크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통한 권력의 사회적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고안된 EU 디지털서비스 법안은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 DSA가 기술과 윤리, 매체와 정보 사이의 기술, 사회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플랫폼 규제의 복잡성을 해결하려 했다는 본래의 목적성에 주목해서 나름대로 제시된 해결책을 중심으로 DSA가 가져온 정책 혁신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재밌게 서두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주요 골자로 해서, 이 내용으로 훑어보면 아까 앞서 제가 생략한 글은 추후에 또 보지 않아도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DSA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기된 권리들이 보호되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DSA는 주로 경쟁 정책을 다루는 디지털시장법안—오늘 여러 번 나오지요. 다 이 법에 연결됐기 때문입니다—DMA와 달리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사업자 규정과 그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 규정을 보겠습니다.

DSA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기능과 규모,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분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등적 규제를 명기하고 있다. 첫째, 정보화사회서비스는 싱글 마켓 트랜스패런시 디렉티브(Single Market Transparency Directive)에 규정된 원거리에서 정기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대가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중개서비스는 그중에서도 단순 전달 서비스, 캐싱(caching)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를 포함하는 카테고리로 정의된다. 네트워크 기능의 작동 및 효율성을 위해 정보 저장 및 전달이 자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전달, 캐싱 서비스와 달리 호스팅은 이용자의 의도적 요청에 따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적인 규정 요건이며 여기에 공중을 대상으로 한 직접 정보 전파, 즉 최종 소비자에 도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를 플랫폼으로 본다.

DSA 사업자 분류 체계는 몇 가지 점에서 특수하다.

첫째, 인터넷 중개서비스에 대해 미 FCC가 커뮤니케이션법 타이틀 1에 따른 부수적 관할권을 바탕으로 규정한 정보서비스로 분류하거나 통신품위법의 유명한 면책조항이 단순히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출판하거나 언급한 자로 규정하는 것 또는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이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반대로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특수 규제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앱 마켓사업자 등을 구분하거나 신문법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정하는 등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분류법들을 도입한 것과 달리 DSA는 근본적인 정보 전송 방식과 기능에 따른 분류를 제시해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역시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으나 정보 유통의 매개로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뉴미디어 환경의 근본적인 규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적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반면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규제는 AVSMD에서, 앱마

켓에 대해서는 더 옴니버스 디렉티브(The Omnibus Directive) 등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셋째, 미국의 면책조항이 외설 또는 음란물에 적용되는 것에 반해 DSA에서는 고려되는 책임 범위가 불법정보로 더욱 넓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의 불법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건부 면책을 사업자의 분류에 따라 다르게 부여한다.

넷째,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등 다양한 의무가 특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에게 부과되는데 이 기준은 시장 전체 온라인 이용자의 10%이므로 한국에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플랫폼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DSA가 가장 많은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함에 있어 양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의 입법 원칙 중 하나인 비례성을 적용한 결과로, DSA의 전문에는 이를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EU에서의 공적 논의와 상거래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즉 DMA와 같은 경쟁 규제가 아니더라도 규모가 큰 사업자는 더 큰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는 관점을 규제에 도입한 것이다. 사회적 책무는 시장지배력과 같이 양적으로 비교적 쉽게 측정 가능한 개념이 아니므로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 의무를 갖는다는 점은 논쟁적 부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비례성 원칙은 그 자체로 양적 규모에 따른 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본래 비례성은 규제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양적 규정을 도입한 것은 소비자 주권, 인권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이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기업 자율성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오는 비용이 상쇄될 것이라는 특수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밌는 해석입니다.

다음,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와 추가 의무 부분인데요.

DSA 대부분의 조항들은 정보화 서비스 일반이 아닌 중개서비스, 즉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정 방식에 따라 유통하는 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제2장은 중개서비스들이 세부 분류에 따라 갖는 유통 정보에 대한 차등적인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제3장은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중개서비스의 세부 분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제2장의 차등적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유통 정보에 대한 조건부 면책 조항을 살펴보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SA는 중개 사업자가 유통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면책 사유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개사업자의 차등적 책임을 규정한다. 단순 전달과 캐싱 서비스는 자동화된 기술과 계약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한 정보의 내용에 대해 분별할 필요가 없이 책임을 면하게 되나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된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의 불법성에 대한 미인지나 인지 시 즉시조치를 바탕으로만 면책이 가능하다. 즉 호스팅 서비스의 면책은 불법정보를 찾고, 특정하며, 삭제할 수 있는 절차와 기술, 즉 스스로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거버넌스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송하는 정보에 대한 면책 사유에 더해서 DSA 제3장은 중개서비스가 투명하고 안전

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 역시 사업자 분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먼저 불법 정보에 대한 조항들부터 검토해 보면, 모든 중개서비스는 규제 당국의 정보 삭제 명령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의 신속성을 위해서 연락담당자와 법률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용자가 불법 정보로 여기는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조치 사항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플랫폼들은 플랫폼이 취한 조치에 대한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만약 이 분쟁이 내부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 규제 당국이 인증한 법정 외 조정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하게는 개인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구성된 신뢰 기반 신고의 감시와 신고에 협조해야 한다. 즉 조직된 외부 감시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새롭게 한국판 DSA를 도입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시민사회 역량이 물론 성숙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전체 우리 국민 전반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상당 수준, 이러한 어떤 자율적인 규제를 충분히 흡수할 만큼 성숙돼 있는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향후 구조개편 이후에 논의될 내용 개편에 있어서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형 플랫폼에게는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제26조에 따라 대형 플랫폼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서비스의 기능이나 그 이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행하고 그로부터 파악된 체계적 위험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주의의무사항이 주로 정보의 불법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대형 플랫폼의 위험평가와 그에 대한 조치는 정보왜곡, 혐오표현, 차별과 같은 유럽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즉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혐오표현의 확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형 플랫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이 과정을 협의 및 감독 아래 두는 일종의 협치를 도입하고 있다. 즉 DSA는 플랫폼을 수동적인 규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의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행위를 하는 거버넌스의 주체 또는 새로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저는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통과가 예상되는 방미통위법을 통해서 위원회가 새롭게 구조개편되어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미디어 거버넌스의 주체로도 인정하면서 서로가 협의하고 협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다음 투명성 의무인데요.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에게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을 의무로 부과한다. 중개서비스 전체에 부과된 기본 요건은 주로 불법정보 처리의 사후적 보고에 불과하지만 사업자 분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좀 더 강력한 의무를 갖는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콘텐츠 관리 조치에 대한 분쟁 조정 메커니즘 의무를 갖는 만큼 이에 관한 정보도 투명성 보고에 포함되

어야 하며 이용정지 처분 수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후 보고뿐 아니라 정보 배열을 위해 플랫폼이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투명성 의무들도 있는데 첫째, 자동화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스펙, 정확도에 관한 정보를 투명성 보고에 추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본격적으로 정보 알고리즘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도 알고리즘에 의한 폐해가 참 많이들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성인의 경우에는 일단 2단계로 하더라도 적어도 청소년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는 방향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이용자가 개별 광고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정보가 광고라는 사실, 광고주, 특히 광고 추천을 위해 이용한 주요한 변수들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대형 플랫폼에게는 한층 더 강력한 투명성을 요구해서 추천 시스템의 주요 변수와 이용자가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용약관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하고 해당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에 기반하지 않는 대체 옵션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한다.

광고에 관해서도 추가정보 공개의무를 갖는다. 공중이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보관소를 운영해야 하며 개별 광고의 구체적 내용, 타기팅한 이용자 그룹,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당 광고가 보여졌는지 등에 대해서 최소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DSA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 감사를 매년 스스로의 비용으로 받도록 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규제 당국과 인증된 연구자들이 DSA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하여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의 메커니즘을 도입하려 하였다.

여기까지가 주요한 DSA의 내용이고요. 나머지 시사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 보고 결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퍼를 작성하신 박찬경 교수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중간중간 제가 전달을 좀 해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사안 이외에도 더욱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메시징앱을 통한 허위정보의 유통, 흥미를 위해 진실과는 다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 댓글 조작 등이 여론과 한국의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돌이켜 보면 한국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이 유럽에 비해 작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 과정은 다소 우려스럽다. 규제안을 둘러싸고 한 측에서는 여론의 향방에 책임이 있는 포털을 일벌백계하려는 의도로 DSA를 전거로 삼는가 하면 다른 측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라며 모든 규제 시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한 탓이다.

그러나 DSA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결코 전무 아니면 전부의 문제일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DSA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단지 내적 정합성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예컨대 허위정보, 차별, 혐오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 규정을 통한 민주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선택된 것이다.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비례성 원리지요.

또 거버넌스에 대한 조항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단순한 통제가 아닌 정책 당국과 기업 사이의 통제, 자율 규제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학계와의 협조, 시민단체의 역할 등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역시 사업의 현실과 정책 목표에 비추어 무엇이 적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섬세한 해석과 법 바깥을 아우르는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반영해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수단들 중 상당수가 해석과 협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담론 투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규제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투쟁의 양상은 법안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이 결론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체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한국판 DSA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주희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심히 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해외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관, 민간 할 것 없이 정말 상당한 양의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한국도 해외의 규제 법안의 논의를 도입하는 것에 주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규율 법안을 마련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한국판 DSA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찬성토론을 하면서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왜 방미통위법안이 발의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서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연역적으로 지금 언론개혁과 미디어 거버넌스 기구의 개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비근한 윤석열 정권까지 어떻게 정부마다 언론이 탄압되었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또 개중에 정권 교체 이후에 국민의 정부부터 어떻게 언론의 환경을 개혁하려고 했었던가, 그런 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조망을 했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윤 정권하에서 있었던 엄청난 언론 탄압 사례들을, 언론 장악 사례들을 구체적인 일지를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치와 언론 간의 갈등 또 언론과 언론 간의 갈등 또는 정치와 국민 간의 갈등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미디어 환경은 정말 나날이 급속도로, 진짜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전혀 형식적인 표현이 아닐 정도로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걸맞은 속도감 있고, 그러니까 신속하면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방송·미디어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중흥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는 있었으나 그것을 실제로 제도화하는 데는 사실상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말은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그 제도가 과연 제대로 애초의 설립 목적 또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의 운영을 해 왔는가,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롭게 우리 국민에게, 시민에게 방송·미디어·통신을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하에 새롭게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재설계해서 발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입니다. 구조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변화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의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아주 동시적으로, 구조개편을 시작으로 해서 동시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중요한 개혁 과제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개혁의 하나의 주요한 꼭지로서 저는 지금 디지털서비스 생태계를 규율하고 또 규제할 수 있는 법안, 새로운 형태의 법안,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한국판 DSA를 정말 이제는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드렸습니다.

중장기적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아주 충실하게 디지털서비스를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갈 텐데요. 그 이전에, 지금 시기에 바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결코 어떤 형태의,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송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 그리고 통신, 이 질서를 통합적으로 한번 규율하고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적인, 정말 진정한 형태의 개혁 과제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들을 저희 과방위 그리고 우선은 저부터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요.

○부의장 이학영 이주희 의원님, 잠시만 광고 좀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지금 방청석에 서영석 의원실 소개로 부천시 지역주민, 어머님하고 자녀 같은데 함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희 의원 환영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실 소개로 부산 강서구 지역주민 3명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체험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주희 의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까 또 다른 국민분들이 왔다가 가셨는데, 제가 사실 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제 얘기를 왠지 경청해서 듣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찬성토론을 시작한 지 벌써 한 6시간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아마 중간에 들어오셔서 저희 논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앞서 국민의힘 존경하는 최형두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고요 저는 그에 뒤이어서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좀 이어 가자면,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또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 OTT, 유튜브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 그리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정말 급격하게 그 영향력이 확장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좋은 정보들을, 우수한 정보들을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도를 등에 업고 우리가 원치 않는, 구성원들에게 해악을 미치는—제가 그냥 나쁜 정보로 통칭하겠습니다—불법 정보나 허위 정보, 그런 나쁜 정보들이 또 무분별하게 지금 확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 온 기존의 어떤 거버넌스 구조로는 이런 어떤 변화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업무가 거의 셧다운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이 구조개편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하에서 통합적이고도 또 각각의 매체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쳐 가면서 적절한 규율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과 내용의 개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을 하면서, 특히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온전한 틀을 만드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개혁하는 법안 그것이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정된 바로 이 법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 지금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큰 틀은 죽 다 흐름에 맞춰서 제가 준비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 봐 좀 빼먹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몇 가지 한 번씩 조금 훑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내용보다 앞서 제가 언론개혁의 또는 탄압의 역사, 어떤 측면으로 명칭을 붙이든 그 전체적인 변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한 사료를 읽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언론과 정부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보수언론들의 맹공 속에서 상당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기억을 저도 갖고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료를 제가 좀 언급을 했었고요. 그 시작이 되는 강연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강연 전문은 혹시 좀 시간이 부족할까 봐 생략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기운이 계속 나고 있어서……

우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 이 전문을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2001년 6월 28일 김대중 정부 언론세무조사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초청 강연이었고요. 그때 당시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께서 한 강연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몇 년 전 나를 이 자리에 초청했다

면 아마 제가 오긴 왔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 보는 날이다, 손해 보는 날이라도 가자'.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한번 해 볼 만 하잖아, 손해날 것은 없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언론은 항상 권력의 반대에 서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서구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권력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견제장치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항상 남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항상 시민사회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권력과 맞설 때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특권이자 자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권력도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주의 자유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언론은 자유를 누려야 하되 언론사주가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 것이냐 하면 기자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언론사주라도 침해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언론사주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방패막이로 하려 한다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모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세금을 탈세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초법적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언론기자의 자유이고 한계는 취재·보도에 한정지어진 것이지 탈세의 자유나 그 밖의 어떤 초법적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은 사주의 특권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자는 사주의 특권을 비호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변호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의문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법언이 떠오릅니다. 모든 의문을 해소시키는 논리 또한 없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한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 이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중앙일보의 보광 세무조사에서 보았듯이 중앙일보는 지금도 건재하고 아직도 정부를 향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 봐서 세금을 내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뒤부터는 꿀릴 것이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정부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자 너무 엄청나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미 덮어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흥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정이 안 되면 언론을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언론장악 의도가 있고 없고 간에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흥정은 없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덮어 버릴 수 없게 하는 데는 여러분들도, 많은 시민단체들도 한몫했고 수많은 시민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이제 권언유착 청산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세무조사를 안 하는 동안에는 언론이 은근히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권력은 언론에 기대할 게 뭐가 없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국가의 조세권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고 언론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보도의 자유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각기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과 언론이 결

탁·유착했던 비정상적 상태가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언론장악이니 떠드는 것은 의도적인 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적은 언론사에 재벌 규모의 세금을 왜 매겼는가 말합니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매출이 적은 언론사가 재벌 규모의 탈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엄두 못 낸 부정을 그들은 당당히 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국가 권력을 두려워했다면 이처럼 방만하고 근거조차 갖추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누구도 초법적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론사주는 건전한 경영자로 돌아가고 정부는 공정한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세무조사 결과로 나타날 새로운 질서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 분야는 지나치게 독점돼 있습니다. 냉전적, 국수주의적, 개발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0년 군사독재의 세월 동안 억압돼 왔던 새로운 사회적 논리를 국민들과 함께 찾고 공유해야 하는데 언론이 지나치게 불균형한 상태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런 역할을 공권력이 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 이후 이런 공권력은 무력화됐습니다. 이제 주먹으로 하던 것을 말로 해야 합니다. 대화·토론·타협을 통한 공론의 마당이 바로 매스컴입니다. 그런데 사회 제 세력 간 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합니다. 과거 30년 동안 독재 권력하에서 형성된 불균형을 깨야 한다. 편향적 시각을 가진 한두 개 매체가 압도적 독점을 바탕으로 역사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맞게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군사독재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사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점이 해체돼야 합니다.

기자는 사주의 횡포로부터 독립되고 인사 편집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큰 과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두 개의 수구·특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들은 과거의 올바른 역사와 정의를 위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회가 군사정권의 군홧발에 짓밟힐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 학생, 서민, 노동자들이 모두 끌려가 개 맞듯이 맞고 고문당할 때도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 서민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해 왔고 그들을 편드는 변호사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비열한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 언론의 자유도 아닌 사주의 자유, 자유도 아닌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구 언론은 사주의 이익과 특권 그리고 이것을 받쳐 주는 수구적 냉전 논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산돼야 할 과거의 가치를 악착같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특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밝히고 법 적용도 일반 시민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청산하고 정도를 가는 언론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언론사주는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국민에게 사죄하고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든가 아니면 언론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스스로 숭고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갖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데 맞서고 직장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항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

다. 시민들은 언론의 편파보도에 매몰되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자기 권리를 찾는 당당한 시민이 돼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론을 수용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역사 발전을 가로막는 한두 개 수구·특권 언론과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2001년 당시에 이런 시대 인식으로 했던 강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주 많은 구절들이 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미통위법안 제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아까 국민의힘 의원께서 하셨고 저는 찬성토론을 하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충분히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지난한 언론개혁과 언론탄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 또 때로는 정부가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을 장악했던 그 숱한,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결국 방송과 통신, 미디어, 이 언론을 구조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사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부침이 컸던 수십 년의 언론개혁의 역사 끝에 지금 이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정말 새롭게 변화된 미디어 환경, 급격히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미디어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그리고 그 개혁된 구조 속에서 충실하게 우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고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내용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개혁과 내용 개혁이 충실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기간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 규제의 일환으로서 지금 정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이 비단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사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각종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특히 유튜브, 포털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율과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의견을 표명해 주고 계십니다.

비단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일하는 국회 또한, 저희 의원들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위 가짜뉴스 퇴치 방안이라고 해서 유사한 형태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내용 규제의 방향에 있어서는 아마도, 지금 아무리 서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사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충실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충실히 수행해 갈 수 있는,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그 조직은 지금처럼 식물화된 이런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가 아니라 좀 더 새롭게 전면적인 조직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조직개편을 또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고 바꿔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오늘 통과가 예상되는 그 법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6시간 정도를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상하게 여기 올라오니까 기운이 점점 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저의 찬성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또 반대토론 목소리도 한번 경청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변호사로 일하다가 국회에 들어온 지 2주…… 아니, 죄송합니다. 2주가 아니라 두 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두 달이 그냥 2년처럼 흘러가는 아주 바쁜 나날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그리고 그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정말 드팀없이 우리의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그 노력들을 이 국회에서 얼마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셨는지를 저도 몸소 느꼈던 두 달이었고요. 저 또한 그 일원으로서…… 갑자기 이상하게 울컥했는데요. 그 일원으로서 국민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이주희 의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장겸)

(11시33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김장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잠깐 물부터 먼저 부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헌법과 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겉으로는 거버넌스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질은 현직 방송통신위원장 축출, 지금 저기 계시는 이진숙 위원장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입니다.

우리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권력 분립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임기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관장하는 방통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임기와 신분보장 원칙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국민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신설 방미통위법은 기관 폐지와 신설을 명분 삼아서 부칙에 이렇게 해 놨어요. 정무직 공무원들은 승계 불가한다 이런 부칙을 끼워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무직은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비수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적 안전핀을 무력화해서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일반성 원칙과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법이 특정인을 겨냥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라 헌법 파괴이자 정치 보복을 위한 흉기가 될 뿐입니다. 이런 입법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공직자는 물론이고 독립기관 종사자 누구라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임기가 끊기는 불안정 속에서 특정 정파의 눈치만 보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송 거버넌스 시대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이름도요 방송이 미디어에 들어가는,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름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신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여기 방청객분들을 비롯한 국민을 기만, 속이는 주장입니다.

기존 방통위와 비교해서 방미통위에 추가된 소관 사무가 뭔 줄 아세요? 유료방송 정책 정도, 그게 더 추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아닙니까? 최근 방송미디어 산업의 핵심 현안이라고 그러면 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의 진흥과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예 배제됐습니다. 이유는 이걸 넣으면 논의가 굉장히 길어진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기 계신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하고 싶은데 이것 시간 끌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헌법학자,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는데 중앙대 이인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헌법학자들이 이게 위헌 소지가 크다 이렇게 세미나에서, 과방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학계의 지적과 OTT를 포괄하는 균형 잡힌 진흥과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업계의 의견도 묵살됐습니다. 오로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진숙 끌어내리기. 하루라도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제정법을 만들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이런 위헌성이 다분한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공영방송…… 공영방송뿐만 아닙니다. 민영방송도 장악하려는,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방송 3법, 그러니까 방송공사법, MBC를 관할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법 이런 방송 3법을 이미 통과시켜 놨습니다. 강행 처리했지요. 그것도 저희 야당 말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뀌었지요.

그래서 방송장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이 밑그림을 보면, 방송 3법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를 민주당과 친민노총 언론노조, 그러니까 언론노조는 계속 친민주당 행보를 해 왔지요. 이런 데서 이사들을 3분의 2 이상 추천할 수 있도록 교묘히 설계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통과된 방송 3법이.

그 부칙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 3법의 부칙에 보면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교체하고…… 싹 갈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그리고 보도채널 사장, 보도채널은 YTN하고 연합뉴스TV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YTN은 이미 민간 기업입니다. 거기 최대 주주가 유진기업이라고. 그런데 민간 기업임에도 보도채널 사장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영방송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위헌적이지요. 위헌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미 통과된 방송 3법이 그

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공영방송과 보도채널 경영진을 소위 친민주당, 친민노총 인사로 채워 넣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라고 말을 하니까 노조라는 '노' 자는 한 자도 안 들어갔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데 안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종사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 방송사는 이미 언론노조가 다 장악해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80%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또 과반 노조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 장악해 있어서 이게 그냥 교묘하게 말만 종사자라고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최대 조합인 언론노조가 큰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해서 언론노조가 속해 있는 민노총에 편성과 인사, 경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이미 쥐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하위법령 제정과 집행이 필수인데 그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현 정권이 보기에 눈엣가시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 방송장악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법을 통과시켜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해서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세워 가지고 방송장악, 민영방송까지 장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방송은요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고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정치적 독립과 임기 보장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 때, 2017년 정권이 바뀌자—제가 MBC 사장이었습니다—저를 강제로 정권이 언론노조와 합세해서 끌어내렸습니다. KBS 고대영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치적 독립과 임기 보장이라는 안전핀을 이미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뽑았습니다. 그런 순간 방송은 권력의 확성기가 되고 국민은 진실을 접할 권리를 잃습니다.

지금 거대 여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일 뿐이지 절대선이 아닙니다. 헌법 위에 다수결을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오늘 이 법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진보 좌파 진영에서, 아까도 앞서서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데 과거에 1980년대 땡전뉴스,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런 뉴스를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이미 이런 소위 땡명방송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PPT 1번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8월 15일 날 광복 80주년에 맞추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취임식을 연 겁니다. 이미 취임식을 했음에도 엄청난 국민혈세를 들여 가지고 셀프 대관식 쇼를 했어야 했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

인 언론이라면 이런 비판도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이것 한번 봅시다. 이걸 지상파방송 3사가 다 생중계를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KBS 한번 볼까요? 이게 1TV로 모자라 가지고 2TV로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축하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상파에서, KBS 2TV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대개 요즘은 편성 시간이 지나고 중요한 프로가 시작되면 거기서 끊고 KBS나 MBC나 유튜브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널 2개를 가진 KBS가 1TV에서 다음 뉴스 시간이 다가오자 이걸 2TV까지 넘겨서 생중계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KBS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부에서……

PPT 2번 편성표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KBS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자체 내 7월 22일 KBS 보도시사본부에서 최초 생중계 편성 요청을 했고 8월 8일 날 KBS 1TV에서 이른바 국민임명식 이것을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8월 13일, 그러니까 8월 15일 이틀 전인 8월 13일 날 KBS 2TV에서 2부 경축 행사까지 지상파 생중계를 편성하기로 결정을 뒤늦게 합니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8월 8일 날 처음에 1부 행사만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 5일 뒤에 8·15가 다가오자 갑자기 2TV에서 기념 공연까지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잘 쓰는 표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제보하고는 다른 제보를 받았는데 대통령실에서 KBS 측에 경축 행사까지, 그러니까 2TV까지 지상파 생중계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단순히 요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요청이 아니라 지시」 하는 의원 있음)

예. 왜 그러냐 하면 말은 요청이라고 하지만 거대 여당이 방송 3법 바꿔 가지고 지금 KBS 사장 날리고 또 그동안에 보면 30여 차례에 걸쳐서 장관들 탄핵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봐 왔는데 이걸 어떻게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외압이지요. 명백한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외압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공영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실 처벌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이런 내용의 비판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게 방송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계속 그동안에 땡전뉴스니 땡박뉴스니 땡윤뉴스니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실질적인 공영방송사에서 하부 구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가 이게 방송 3사가 저 행사를 다…… 만약에, 보십시오. 보수정권하에서 저걸 중계했다고 그래요. 성명 내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어요, 민노총 언론노조가. 제가 성명서 하나 나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입만 열면 방송의 독립과 공정을 운운하던 그 집단이 실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방송법

빨리 통과시켜라, 환영한다 이것 아니에요?

이것 저희 과방위에 각 방송사 언론노조 간부들이 나와서 다 환영했어요, 환영. 이렇게 되면 진짜 정치적 야욕을 품은 정치단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민영방송이면…… 여러분들, 미국의 민영방송 CNN이나 폭스뉴스는 색깔이 분명히 달라요. 그것은 국민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MBC, KBS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KBS는 시청료, 시청료가 뭡니까, 수신료? 국민의 세금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MBC는 수신료는 안 받지만 그 재산 자체가 국민의 재산이고 그 구성원들도 다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정해야 되고 공평무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정권하에서 땡박뉴스, 뭐 땡전뉴스라고 욕하던 그 집단과 그 구성원들이 지금 땡명뉴스에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방송 3사가 그 황금시간대에 국민혈세를 엄청나게 들인 두 번째 취임식, 내가 대통령 취임식 두 번 하는 것 사실 사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황금시간대에 방송을 했는데 제대로 비판조차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러니까 이 현상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민주당이 지금 방미통위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8월 15일 날 혹은 지금 우리 공영방송 메인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방송이 이재명 정권 홍보 방송, 민주당과 민노총의 정치공작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왜 이토록 방송장악에 집착하는지,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민주당과 민노총에 방송이 장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이 방미통위법이 얼마나 위헌적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역대 자신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왜 이 공영방송 장악에 집착할까요?

PPT 1번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정치공작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시면 2002년, 잘 모르시겠는데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폭로 논란까지, 이게 동일한 패턴입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정치 전략, 정치공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혹 확산 메커니즘은 마치 정교한 현대식 공장 시스템같이 작동을 하고요. 또 각 단계마다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요, 유튜브와 좌파 인터넷 매체들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유튜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또 뉴스타파—이건 사실상 언론노조 직할 매체나 마찬가지지요—또 열린공감TV, 매불쇼, 일요시사 등의 유튜브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의혹을 최초로 던집니다.

그때도요, 그때나 20여 년 전이나 최근에 서영교 의원이 내던진 그거나 다 이게 녹취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음성 조작 혹은 짜깁기, 편집된 자료 이런 걸 서슴없이 활용하지요. 그리고 사실 여부보다는 제목을, 유튜브 같은 경우에 섬네일이라고 그러지

요, 이거를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내용으로 달고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이게 던져 주면 친민주당 시민단체나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나섭니다. 그래서 공식화 작업을 하는데, 유튜브들이 던진 의혹을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거나—면책특권이 있거든요—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 의제로 띄웁니다. 만들기 위해서 띄우는데 여기에 친민주당 시민단체, 친민주당 언론단체 또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걸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공식화하는 작업에 한몫 거드는 거지요.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보라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에서 하는데 제보의 근거는 참 빈약하거나 아니면 카더라 이런 게 많지요.

그리고 의혹 제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회의원의 권리다, 의혹 제기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권리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요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의혹이든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근거가 빈약하면 정치공작이지요. 그게 의혹 제기가 아니지요. 더 이상 의혹 제기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방송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젠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종의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이러한 의혹들을, 우리 그런 사례를 많이 봤을 겁니다. 반복 보도합니다. 그래서 기정사실화처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계에서 의혹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적 이슈로 돼 버립니다. 지속되는 논란에도 공영방송의 편향적 보도 행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반복됩니다. 몰빵 보도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진실 공방을 통한 의혹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공영방송이 한 번 보도를 하고 나면 의혹 제기, 반박, 재반박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이게 오히려 의혹이 확산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게 돼 버립니다. 반복 노출을 통한 각인효과가 생깁니다. '아, 뭐 있겠지. 뭐 있으니까 그렇겠지. 공영방송이 설마 가짜 뉴스를 보도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쁜 국민들, 바쁜 청취자, 시청자들이 구체적으로 깊은 기사를 찾아 가지고 탐구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생계도 바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서 제목…… 사실 공영방송의 뉴스 리포트를 끝까지 듣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고 '그런 공영방송이 가짜뉴스를 진짜 보도할까?', 중도층에는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아,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지층은 맹목적인 결집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밝혀진 청담동 술자리 그 파동에 관한 것들도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보면 아직도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의 결집, 뭐든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거는 아마 사실일 것이다 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다음에 진보좌파의 전략이 ‘아님 말고’ 전략입니다. 이런 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고소·고발하지요. 그러면 또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해 보면 ‘아니, 이게 거짓말이다. 의혹이 사실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업 병풍, 나중에 대선 끝났는데 수사해 보니 뻥이야 했는데 이미 이회창 후보는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임이 밝혀져도 정치적 목표, 목적 이거 달성된 상태거든요.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은 ‘진실규명이 되었으니 참 잘됐다’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아니, 우리가 제보받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지’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또 유튜브나 제보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정치공작 메커니즘이 2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핵심이 바로 공영방송의 역할 때문입니다.

아까 저기서 세 번째, 대대적인 보도로 어젠다 세팅을 한다는데 공영방송이 대대적인 보도로 어젠다 세팅을 해 주지 않으면 유튜브나 제보자의 의혹 제기는 그저 루머에 그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광우병,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광우병 보도를 MBC를 비롯해서 대대적으로 했지요.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요. 사실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공영방송의 역할이 거의 메인뉴스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니, 그거 사실무근이야’…… 이미 소기의 진보좌파, 민주당, 친민주당 세력이 얻고자 하는 효과는 다 얻은 거지요.

2번, 김대업 병풍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젊은층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걸 한번 보시지요. 대표적인 정치공작 메커니즘인데 이게 가짜뉴스 원조고 대한민국 선거사를 뒤바꾼 김대업 병풍 사건입니다. 김대업 병풍 사건이 2002년에 일어났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이것 때문에 가장 역전의 결과를, 뒤바뀐 대선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공작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의혹 확산 전략의 기본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단순한 의혹 그 자체를 넘어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파급력을 보여 줬습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김대업 전직 부사관이 이회창 후보의 아들의 병역비리를 제기하자 지지율이 무려 11.8%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 의혹은요 처음 2002년 5월 소위 진보좌파 매체라고 볼 수 있는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의 제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대업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1997년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 회의가 열렸다’ 그래서 녹취록이 등장합니다, 녹음테이프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이는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위조가 되었냐? 그 녹취록 테이프가 김대업이 몇 월 며칠날 녹취가 됐다라고 주장한 날짜보다 한참 지나서 그 테이프가 만들어진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그건 조작된 테이프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김대업과 같이 활동했던 분이 있더

라고요. 누구냐? 중앙일보 올해 6월 18일 날 '박진석의 시선'이라는 칼럼을 보면, 1998년 7월 국방부 소속 검찰부 고등검찰관에게 한 전직 군인이 찾아왔다. 막 출소한 전과자였던 그는—김대업을 이야기합니다—병역비리 브로커였고 당연직 병역비리 전문가였다. 수사 돌파구가 필요했던 검찰관은 이 김대업을 쓰고 싶었다. 이에 상사는 마뜩잖게 생각했으나 검찰관이 재차 조르자 원한다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일임을 했습니다. 김대업은 과연 족집게였습니다. 검찰관은 김대업과 함께 일하면서 수백 명의 병역비리 사범들을 적발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브로커 김대업이 대선에 관여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업이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관련 핵심 진술을 윗선에 보고했으나 은폐했다고 주장한 거지요. 그때도 그 검찰관은 김대업과 언행을 함께 했다. 그 폭로는 이 후보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한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 검찰관이 누구냐? 이명현 소령이었는데 지금 채 상병 특검입니다. 채 상병 특검이 김대업과 한때 같이 일을 했네요. '이른바 채 상병 특검으로 임명된 바로 그다' 이랬습니다. 김대업과 같이 일을 하셨던 희대의 병역 브로커, 정치공작을 한 김대업과 같이 일한 분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특검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역비리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앞서 보여 드렸듯이 공영방송인 MBC와 KBS가 나서서 연일 도배를 하다시피 합니다. KBS만 봐도 검증 없이 팔십여 차례나 집중 보도하면서 의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대업이 수사관도 아닌 그냥 조력자인데 수사관 신분을 사칭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방송은 김대업 주장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뤘습니다.

김대업은 2004년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이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대법원은 김대업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 오마이뉴스에게는 3000만 원을 배상하라, 일요시사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 총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은 바뀐 후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끓고 있는 오세훈 내곡동 생태탕 사례 한번 볼까요.

왜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에 집착할까.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생태탕 의혹인데 이것도 보면 김대업 병풍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TBS 뉴스공장,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마 서열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이는 괴담 장사꾼 김어준이 오세훈 후보의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을 경작했다 하는 김 아무개 씨를 인터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생태탕을 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김 아무개 씨가 2005년 6월에 국회의원이던 오세훈 후보가 장인과 함께 측량 현장을 방문했고 이후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4월 2일 날 생태탕집 사장 황 씨하고 그 아들이 뉴스공장에 출연을 합니다. 출연해 가지고 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냐 하면 오세훈 후보가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흰 바지를 입었다. 아니, 이것 16년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할까요? 16년 전에 페라가모를 신고…… 페라가모, 명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흰 바지를 입었다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듯이 증언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이제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지요. 그리고 첨병이지요, 민주당 방송이나 다를 바 없는 MBC가 생태탕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오세훈 후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일요시사가 4월 2일 이전에 3월 29일 전화 인터뷰 한 것을 공개했는데 거기는 생태탕집 사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음성파일이 공개됐지요. 또 그 아들 역시 오세훈인지 몰랐다라고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3월 말에는 16년 전 이야기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한 사흘 뒤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가 가지고는 페라가모를 신었고 흰 백바지를 입었고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래서 검찰이 관련자 20여 명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샅샅이 확인했는데 결국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게 뭐예요? 결국 타이밍 아닙니까? 선거 직전입니다. 선거 직전에 단시일 내에 진실규명이 쉽지 않은 의혹을, 어려운 의혹을 퍼트립니다.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그대로 드러난 거지요.

최근에는 소위 내란몰이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과 여권이 서울시장, 인천시장 또 저희 당 국민의힘이 배출한 광역단체장을 향해서 계엄 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됐지요. 그것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거지요.

다음, 4번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한번 볼까요?

이것 역시 타이밍이지요. 2022년도 대선을 뒤흔들었습니다. 2022년 대선 막바지에 이 녹취록이 또 등장합니다.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에—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지요—이 녹취록을 딱 그때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고 짜깁기된 일종의 조작된 정보를 통한 선거 개입 시도였음이 후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 6일 날 뉴스타파는 김만배와—대장동에 등장하는 김만배 씨입니다—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6개월 정도 된 2021년 9월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이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과장 시절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 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지요. 이 뉴스타파의 보도는 소위 선택적 편집, 악마적 편집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녹취록 사이에서 '통했지, 그냥 봐줬지' 이 부분입니다. 편집된 버전을 보면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 이런 말이 편집돼서 보도가 됩니다.

실제 녹취록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김만배가 한 번에 말한 것처럼 들리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냥 봐줬지'의 주어는 박 모 주임 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타 줬다 그랬지요. 커피 의혹 역시 조우형에게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 주더래' 하면서 마치 윤 후보가 조우형의 커피를 타 주며 사건을 무마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김만배가 '혼자, 거기서 타 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라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 뉴스타파가 보도되자 당시 이재명 후보는 다른 언론이 보도하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 전략에서 보듯이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대선 이틀 전에 이 뉴스타파 보도를 받아서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4개의 리포트를 제작하고 일곱 번의 녹취록을 방송했습니다. 사실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의혹, 사실 MBC의 선거방송준칙에도 검증되지 않은 것은 선거 임박해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제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MBC뿐만이 아니라 KBS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진보 좌파의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 사건은 1시간 12분가량의 통화를 특정 부분만 떼어 내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편집권이 어떻게 정보 조작, 정보 왜곡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짜깁기된 녹취록의 허위성이 명확해졌는데 이미 대선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지요. 그것도 막판에 말이지요. 이게 바로 '아니면 말고'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볼까요.

잘 알려진 김의겸 전 의원 이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좋은 데 가 있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인가 가 있는데. 이 유명한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2022년 국정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올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이어진 사건인데 이것 역시 민주당식 의혹 제기 패턴을 가장 명확히 보여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가, 여기도 사실 녹취록이 등장하지요,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 어떻게 국회라는 공적인 장소를 통해서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는지 잘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자칭 시민언론이라고 그러지요. 더탐사라는 매체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합니다. 이 당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관련 녹취록을 틀면서 의혹을 공론화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집중하는 국정감사라는 무대를 이용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했는데 사실은 아무런 입증할 진술도 증거도 없고 그냥 사실과 다르게 말한 녹취록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올해 8월이지요, 지난달이네,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해서 7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1000만 원. 그래서 한 전 장관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는데,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민주당이 역시 앞서 지적했듯이 국회의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명백히 허위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아직도 사실인 양 믿는 분이 많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전 의원 지금 잘됐다고 그랬지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가짜뉴스 유포의 공으로 거기 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겁니다. 서영교 의원이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주장을 봅니다. 이거 보면요 23년, 20년 이상 지속된 패턴이 아직도 바뀌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거 자체도 아까 그 공식에서 보여 줬듯이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잘 쓰는 '제보를 받았다', 이것도 제보지

요. 제보를 받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와 검증 불가능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지요. 조희대·정상명·김충식·한덕수 4명이 만나 점심을 먹었고,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그런 녹취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서영교 의원께서 나오셔서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내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정확하지 않지만 믿을 만한 제보다', 상당히 모순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자 출신인 제가 듣기에는 '아니면 말고' 이렇게 들립니다.

전례 없는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까지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 표현은 '도대체 대법원장이 뭐길래'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역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자료 조작 가능성에 이거 AI 음성이다 이렇게 하니까 서영교 의원이 '유튜버에게 물어봐라', 책임을 유튜버에게 떠넘기는 거지요.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그 유튜브에서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터뜨리고 난 뒤에 AI 아니냐고 어디 뉴스 기자들이 기사를 썼길래 그 기사를 읽어 보니까 서영교 의원한테 몇 번 확인 전화를 했는데 딱 부러지게 '내가 잘못했다. AI 음성인 줄 몰랐다. 알고도 썼다' 이렇게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사건 이거 현재진행형입니다. 이거요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지만 앞의 사례들하고 너무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좌파 매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민주당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공식화하고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친여 공영방송이 확성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론전을 통한 의혹 확대하고, 이 공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앞서 보여 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이상 반복된 정치공작 사례들을 지금까지 쭉 봤는데 소위 언론노조가 사실상 장악한 공영방송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핵심 도구로 사용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이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법을 통과시켜서 이 방송 3법을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 이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 의도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것인데. 그러니까 KBS·MBC·EBS 이사 수가 현재는 9~11명인데 많게는 15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친민노총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학회, 현업 단체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게 실상은 친민주당 성향 단체들을 통한 간접 장악의 전략입니다. 2017년 저와 KBS 고대영 사장이 쫓겨 나올 때도, 문재인 정권 시절이지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2017년 9월 8일 자 조선일보 폭로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구성원들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접 쫓아내기보다는 이런 취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나섭니까?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나서지요. 그 폭력성을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방미통위 설치법 또한 규제기관을 장악해 가지

고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인사들이 핵심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고착화시키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그 핵심이 있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의 관할 이런 것은 다 빠지고요 유료방송 조금 넣어 가지고 이름만 사실상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유가 명확하지요. 이진숙 위원장 끌어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좌파 영구 방송장악법,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슨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방송이면 공영방송의 내적 다원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안에서 구성원들도 보수든 진보든 목소리가 다양하고요.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게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아니,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고 오직 친민주당 방송만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어제인가요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가장 신뢰하지 않는 언론이 MBC라고 났습니다. 반대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도 MBC라고 났더라고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반만 쳐다보고 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민간 영역의 방송이면 그럴 수가 있지. 국민의 재산이 그러면 안 되지요. 내적 다원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소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치공작, 앞에까지 죽 예를 보여 드렸듯이 정치공작의 시스템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대업 사건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까지 20년 이상 반복된 의혹 확산 패턴을 영구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에—지금은 민간방송까지, 보도채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그토록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통한 간접 장악을 아마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민노총은 어떤 곳인가? 이거 내가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민노총이 어떤 곳이길래 거기 산하 언론노조가 그렇고 또 거기에서 친민노총 인사, 민노총 언론노조 인사들이 영구적으로 이 사들로 추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간접 장악하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볼게요.

8번.

민노총 창립선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령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해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정치세력화 교안을 보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힘 있는 세력으로 조직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이익을 사회·정치적으로 관철하고 나아가 보수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권력을 바꿔 내서 궁극적으로 한국사회를 바꿔 내는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상당히 정치 냄새가 많이 나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번.

그런데 민노총은 창립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뭐라고 주장해 왔느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의 해체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2007년 8월에 8·15 민족통일대회 조직적 참가 선언문 그리고 노동자통일토론회 자료 공식결의문 이런 걸 보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자주적 평화통일의 선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적 통일만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능케 한다. 2개의 나라로 고착하는 연합제는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지금은 김정은이 2개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남북노동자대회, 8·15 대회에 연방제 통일 합의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고요. 연합제는 외세 개입을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소위 민족 자주 실현과 미군 철수를 연방제 통일 실현의 선결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전에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아닙니까?

10번이요.

보면 그동안 행적이 사드 배치하고 기지 공사를 전면 반대하는 운동을 펴 왔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민노총이 2016년 이후 경북 성주·김천 등 사드 배치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조합원을 동원하여서 반대 집회, 기자회견, 법적 소송, 미대사관 포위 시위 등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2017년과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에도 사드 공사 반대 시위, 불법 공사 중단하라 또 정부·미군 규탄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매주 소성리에서 주민과 연대해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집회 중에는 경찰과의 대치, 연행, 부상자 발생도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명에서 사드는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 전략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전쟁 위험만 가중시킨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그 당시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라도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2022년 8월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시위를 합니다. 2022년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대규모 집회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를 내세우고 했습니다.

2022년 남북 노동자 3단체 그러니까 민노총·한국노총 그리고 북한직총이라고 하는 데하고 같이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동맹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세력이다' 하면서 각종 선언과 시위, 캠페인,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11번을 보시면……

그리고 통일선봉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결성해서 미군 기지, 미대사관을 비롯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해체와 한미일 군사협력 저지를 내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서울, 2023년 부산 미8부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반미·반군사 동맹 집회를 열었고 결의문과 피켓,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정부의 대미 군사정책을 공개적으로 규탄을 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작년이지요—중앙통일선봉대 전국 반미 투쟁 시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해서 선봉대로 나서서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점점 끌고 가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 당사에 물풍선을 투척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이런 문구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번.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총 102회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포고문을 발신했는데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을 비롯해서 군사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보면, 보도를 내가 지나가다가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락처·신원 일체를 다 해서 북한에 보고한다 이런 내용까지 판결문에 들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전화번호 다 공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뭘 또 북한에 보고까지 하고 그런 것인지……

13번 볼까요?

2018년 지방선거의 민주당 지도부 유세 현장에서 민노총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라고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안하무인식 발언을 합니다.

2022년 12월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를 위해서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을 하고요. 결국은 민주당이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지요. 그래서 일곱 명 가운데 두 명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가 되었는데 민주당은 강력한 항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전국 12개 민주당 시도당사를 동시 점거하면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압박을 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충북 광주 강원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제주도당을 무력화를 시켰는데 노조법 2조·3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비롯해서 민주당, 그러니까 민노총의 핵심 요구안이 민주당 정책으로 그대로 채택되어 추진되었지요.

이렇게 당사 침입과 모독적 발언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달래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민노총이 스스로를 민주당의 상급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그리고 이를 수용을 해서 비정상적 주종관계가 구조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사실상 하부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 방송3법과 방미통위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되었지요,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14번.

김영훈 현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년부터 12년까지 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강한 친북·반미 성향을 보여 왔습니다. 방북을 여섯 번 신청했고 2021년 김정일 사망 당시에도 조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을 했습니다. 한미 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을 지속적으로 해 온 소위 반미 인식을 가진 반미·친북의 대표 주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5번이요.

김영훈 장관이 소위 연북의식에 대해서 “부를 때 그냥 김일성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북에서는 김일성이를 부를 때 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리고 김정일이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부르는데”, 북한 지도자에 대한 경칭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연북의식이 없다면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아들에 불과한 것인데’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조국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시절인데 이분이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얼마 전에 되었지요.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서 ‘단순히 남쪽의 경험에 비추어서 군대=독재권력=나쁜 것 등식화를 스스로 내리고 북을 재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라며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6번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노총이 주도한 행사가 열렸는데 다음과 같은 친북·반미 문제들을 노출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퀴즈 내용을 보면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는 언제냐?’ ‘2008년부터 미국 놈들이 해 온 전쟁 연습이 무엇이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이냐?’ ‘북한과 교역하는 걸 미국이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만든 협정은 바세나르 협정이다’ 이런 퀴즈 내용을 냈어요. 이게 천리마운동, 비날론 이런 것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용 내용들인데……

사회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금렬 교사가 사회를 보면서—사회자입니다—‘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런 퀴즈 문제는 민노총이 발간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에서 출제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북한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적 교재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로 인정하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요.

17번이요.

그래서 김영훈 장관이 이런 골든벨 행사 관련해서 ‘천리마운동, 비날론 등 북한 선전용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이렇게 송언석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행사 후에 보고받았다’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알았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다시 ‘북한 체제 선전용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북한 체제 선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지금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8번.

우리 당의 우재준 의원과의 질의에서는 ‘김정일 조문을 대한민국 정부도 안 갔는데 왜 가려고 했냐?’라고 물으니까 김영훈 장관 답변이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부 대신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재준 의원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순직한 대한민국 장병 조문은 간 적이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훈 장관이 ‘간 적이 없다. 국무위원이 된다면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가 보셨는지.

19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님과의 질의 답변 내용에서는 ‘김정은은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들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주적인가?’ 그랬더니만 김영훈 장관이 ‘그것은 김정은의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했고, 다시 질문을 ‘북한에서 종종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물으니까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네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김정은이 위협이지 않나?’라고 하면서 답을 ‘예’라고 하면 된다고 했더니만 김영훈 장관이 억지성으로 ‘예, 맞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민노총의 산하단체인 언론노조 한번 볼까요? 언론노조가 사실상, 공영방송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하부 구조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와의 관계를……

20번 볼까요?

그리고 김영훈 장관에게 ‘민노총은 종북단체인가? 지금의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어떠냐?’ 하니까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21번.

그러면 이제 기자, PD, 방송사 경영이나 방송사 엔지니어들이 소속돼 있는 이 언론노조와 언론노조가 소속된 민노총은 과연 다른가 이걸 한번 볼까요?

언론노조가 2012년에, 그 뒤에 해산됐지요. 해산 정당인 통합진보당하고 정책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통합진보당과 스무 개 조항의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친정권 낙하산 사장 퇴출, 공영언론 지배체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전면 개편 등이 포함됐는데 이게 쭉 해 와서 최근에 다 요구대로 실현되고 있지요. 지금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또 정권까지 가져갔으니까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낙하산 낙하산 하는데 정말 낙하산은 사실은 진보 좌파 진영의 낙하산이 진짜, 봐도 낙하산…… 예를 들면 KBS 사장을 신문사 출신이 가고요, 신문 출신이 가고. MBC도 당시에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느닷없이 MBC 사장으로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노조가 낙하산이라고 입 밖에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승진을 한 보수 정권하의 사장들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낙하산이라고 집중 공격합니다. 어디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데도 없이 올라간 사람한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시에 사회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차곡차곡 해서 임기를 마치고 사장이 됐는데 노무현 시절에 최문순 MBC 사장이 부장에서, 부장대우에서 갑자기 사장으로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 언급했듯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그게 진짜 낙하산 아니냐?’ 하니까 ‘그것은 착한 낙하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하산도 진보 좌파가 하면 착한 낙하산이고 내부 승진해서 또박또박 뚜벅뚜벅 올라가도 자신들 말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낙하산입니다, 나쁜 낙하산입니다.

22번이요.

MBC가 대표적으로 소위 민주당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이러면서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 날 연상’이라고 보도하면서 전두환 군사 정권과 비교합니다. 반면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쳤다’ 극

찬을 합니다. ‘화려해진 김정은 찬양식’이라며 비교적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을 많이 비판하지요. 군사, 1980년대의.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방송 3법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방미통위법을 무지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KBS 사장, YTN 사장 이렇게 몰아내고 또 압박하고 또 이진숙 위원장 몰아내고 하는 이게요 이게 사실 80년대 신군부의 언론장악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직접적인 물리력으로 언론 통폐합을 실시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것은 자신들의 우호 세력을 통한, 소위 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한 뒤에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CEO들을 싹 정리하고 또 자신들이 유리한, 항상 자신들의 편에 설 만한 편향적인 단체나 인사들이 이사들이 되게끔 그렇게 고착화함으로써 영구 장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법만 교묘해진 거고요. 본질은 저는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100일이 지났지요. 보면 이게 공영방송에서 사실 그동안 제대로 여러분들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다루지 않은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보수 정권하에서 벌어졌다면 아마 지금 언론노조가 장악한 이른바 공영방송이 난리가 났을 텐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실 저희 당에서 ‘국정 파탄 실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 펴냈는데 이게요, 언론에서 특히 공영방송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무관심하게 영구적으로 만들려고, 이런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방미통위법이라든지 방송 3법이 아닌가.

제대로 보도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거대 여당의 힘으로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증인·참고인이,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증인·참고인 1명도 없었습니다. 1명도 없는 인사청문회가 반복됐습니다. 저기 계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며칠 한 줄 아십니까? 총리도 이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흘 했어요, 사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사흘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청문회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영방송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보도한 것 같습니까?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 같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현재 공직후보자 25명 대상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고작 15명입니다. 증인 12명, 참고인 3명입니다. 이런 것을 언론이 중점적으로, 공영방송이 했느냐?

거기다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출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청렴성·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자, 이것 한편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사실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이야

기를 했어야지요.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윤 정권 한참 공격하다가 총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청문회 자료의 비공개 열람 범위를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속 시원하게 비판한 걸 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당에서 이 책자도 편찬하고, 편집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펴내고.

교육부장관후보자 지명했는데, 이것 한번 볼까요? 이게 잇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앉아 계시는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동명이인인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 이분 결국 낙마했지요, 온갖 의혹에. 그런데 최교진, 임명을 강행한 최교진 후보자 이분도 논문표절 의혹부터 정치 편향성까지 사실 교육부 수장으로서 기본 자질이 없는 분 아닙니까? 이분 보면 음주운전 그리고 여학생 성적 떨어졌다고 여학생 뺨까지 때렸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 전교조분들은 성적에 대해서 좀 관대하지 않나요? 그런데 막말을 일삼고, 천안함에 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부산·대구 폄하 발언 그리고 입시 비리 또 조국 옹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글을 공유했고 이랬는데, 이랬는데 우리 책임감 있는 공영방송이 아주 날 선 비판을 했다면 이분이 교육부장관에, 아무리 거대 여당이지만 혹은 출범한 이재명 정권이지만 이런 분을 교육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관련한, 이분은 결국은 본인이 철회를 했지만, 사퇴를 했지만 이분 관련해서도, 사실 이분도 공영방송보다는 다른 방송에서 보도를 먼저 한 것으로 기억해요. 공영방송의 역할이 없었던 거지요, 부족했고. 보좌진 갑질 논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민영방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입을 닫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법과 방미통위법을 바꾸고, 새로 이른바 라벨갈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이춘석 의원 국기문란 게이트 이것 한번 보시지요. 이것 보니까 내가 그날도 보니까 이게 온갖 차명계좌 이런 게 있는데 그날도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앞쪽에 배치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메인 뉴스에는. 한 중간 정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사실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사실 우리 당,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의 토론 기회까지 안 주면서 아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이래서 사실 방송장악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분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보면 본인이 직접 개발했다는 성취 예측 모형이 있는데 정직성, 자기 인식 능력, 과거 행적과 성과, 의사결정 패턴, 비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비교나 외부 검증은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96점, 추미애 의원 78점, 극히 주관적인 점수로 보입니다. 이것을 적용했고.

그리고 유튜버 시절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부성 발언으로 유명하지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하고 우리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 영재성을 가진 천재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네요. 5년은 너무 짧다, 헌법을 좀 바꿔서라

도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욕설을 하이데거의 존재 경험이라 이렇게 감쌌고 김어준 씨하고 묶어 가지고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 두 천재다, 천재도 여러 부류의 천재가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서도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결국 나라를 들어먹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하긴 7대 기준이 적용되면 본인이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에 진짜…… 그래서 조국 사태 때도 본인 페이스북에 도덕성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정상적인 작동을 해서 비판을 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분이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에 과연 임명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또 압권이 윤미향 씨를 두둔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을 두둔하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가 그 이후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송이, 특히 공영방송이 어떻게…… 과거에 김대업 보도나 광우병 보도나 또 여러 사례들이 있지요. 그것처럼 비중 있게 보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봅시다. 성남 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림자 권력 논란,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하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기를 쓰고 막았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 핵심 문고리 라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면담 일정 조율, 그리고 보고서 전달하는 부속실장에 성남시장 재임 때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을 임명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성남·경기 라인인 윤기천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에 임명이 됐고 해서 소위 성남·경기 라인이 전진 배치됐고, 여기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있는데 이분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게 인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정권 실세 중 실세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이분이 학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림자 권력 지적이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에서도 김현지 비서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례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안 나온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공영방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언론노조는 민노총과 다른가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22번 이것은 했었고요. 23번으로 넘어갈까요.

사실 진보 좌파 진영이 지금까지 노래를 불렀던 게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3법을 비롯해서 방미통위법을 봐도 이것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전문위원을 지낸 분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적인 글을 써 가지고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정치권력 배제가 아닌 자발적인 권언, 권력과 언론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언론단체들이 자신들은 언론노조의 이중대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연대, 시민단체에 보면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교조·PD연합회 등 그 언론개혁 뭐 하고 이렇게 되면 한 40여 개 단체가 같이 '와' 하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수십 개, 심지어는 수백 개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항상 보수 우파 정권 때는 비판하고 또 진보 좌파일 때는 그 비판의 강도가 확 줍니다.

그리고 어떤 평론가들이 그럽니다. 언론노조가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박수민이라는 평론가던데, 언론노조가 지난번에 소위 언론중재법 징벌적 배상제를 반대한 것을 두고 그것을 예를 들면서 굉장히 언론노조가 중립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의 예를 계속 라디오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언론노조가 소위 친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것은 자기들이, 구성원들이 소속돼 있는 소위 회사나 혹은 그 구성원들이 그걸로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러는 거지 아니, 그게 무슨 중립적…… 그것을 가지고 중립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봐야지요.

MBC, KBS 보면 보수 우파 정권 되면 끊임없이 파업을 반복했습니다.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8·15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두 번째 하면 그것이, 중립적이라면 그 앞에 소위 다른 정권 때 해 왔던 것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중 잣대를 가지고 마치 공정한 것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 당해 본 저로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24번 볼까요.

아까 민노총 강령 살펴봤는데 민노총 강령 2호, 전국언론노조 강령 4호에 보면 정치세력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정치세력화가 목적이라면 사실은 노조가 아닌 정치집단입니다. 정치집단으로 봐야 됩니다. 언론노조가 노조원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입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맞지 않거나 반대되는 게 보도가 쉽게 되겠습니까?

편집회의에 언론노조원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언론노조원이 편집회의의 부장들 난상 토론하는데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언론노조에 반대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쉽게 발제하고 지지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부 구조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법을 통과를 안 시켜도 이미 인사권 같은 것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다 넘어가 있어요. 주요 방송사의 보도국장이나 이런 자리,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성원의 신임 투표, 동의 투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성원이라고 하면 말장난이지요. 다수인 언론노조원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아주 졸속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항구히, 영구히 장악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5번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 강령 1호 보십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강령 1호를 보면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6번 보면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게 다 이 법 통과로서 사실상 실현이 됐지요. 노사 동수, 노조라는 말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종사자 다수가 노조원이면 노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장난을 할 게 아닙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건 사실상 이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권한을 보면 경영권을 간섭하게 돼 있어요. 이미 단체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노조원들의 편집·편성회의 참관 이런 게 이미 확보가 돼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MBC에서 부장으로 근무할 때가 한참 전인데 이미 노영방송이라고 할 만한 사례를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부장 때는 노조 간부가 저한테 올라와서 데스크를 차장이 본 걸 가지고, 내가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노조 사무실에서 보고 있다가 '부장님, 데스크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완전히 협박이지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회부장 때는요 물어 와요. 민주당 정치인 누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에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 대대적으로 보도하라는 압박이지요. '오늘 이것 몇 꼭지 하실 거예요?' 노조 간부가 물어 옵니다.

언론 자유는 편집·편성권 그 자체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됩니다.

27번이요.

MBC는 당초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추진했는데 회사 측이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뭐 회사 측의 강력 반발에도 편성권은 경영권 하위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MBC 노조는 노사 동수의 기존 공방협과 함께 운영할 경우 공정방송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MBC 장악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제 이건 법으로 그냥 할 수 있게 됩니다, 방미통위법이 통과돼서 완전히 되게 되면.

28번 볼까요.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이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서 방미통위법까지 통과돼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사실상 언론노조의 주도성이 보장된 개정안입니다. 방송편성과 제작에 대한 권한을 경영주체인 방송사업자로부터 언론노조로 이관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종사자 상당수가 가입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방송사업자의 의무 기구로 도입된 편성위원회 구성 및 보도책임자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경영이사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사권을…… 지금 경영진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지요, 이름만, 책임만 남고 권한은 없고. 방미통위법이 통과돼서 기통과된, 이미 통과된 방송 3법이 다 실행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도전문방송이라는 YTN, 연합뉴스TV를 또 표적으로 삼았는데 YTN은 이미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됐는데, 사장 선임까지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29번이요.

그동안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을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장 임명제청권 개입을 위한 인사권 장악인데 이제 이 이상으로 얻는 거지요. 방송법 개정안 제20조, 이미 개정

되었지요. 민영방송인 보도전문채널 YTN을 시작으로 사 측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 임명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노조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스스로 선출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 아래서 스스로 방송사업의 경영을 결정하고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 할 뉴스의 가치를, 그러니까 방송의 노동자 자주관리시스템으로 도입되는 그런 꼴인데 공영방송은 특히 방송 종사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방송 종사자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30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번 볼까요.

이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장악이 됩니다. 지금 민간 기구로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국가가 방송을 검열한다라는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조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아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종종 오해하고 준공무원, 준공공기관으로 판단한 사례가 몇 번 있는데 이게 사실 설립 취지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 그것이 넘어오면 방통위원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서 의결해서 실행을 하는데 그 내용을 바꾸지 않아요. 그 내용을 바꾸기 시작하면 방통위원회가, 소위 국가기관이 검열한다 이런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심위가요, 언론노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위 친좌파진영, 소위 친민주당 목소리를 계속 내 왔는데 이것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게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가 많고 구성원들이 언론노조원인데 언론노조원들이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게 있으면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심의위원회 조직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분들이 또 언론노조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언론노조의 방송산업 하부구조 장악 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사실 내용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국민 50% 절반은 무시하고 왜 선거 때마다 한쪽 진영의 나팔수가 되는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이유를 이걸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1번, KBS 현황을 보겠습니다.

KBS는 민노총 소속인 언론노조 KBS지부 그리고 언론노조의 정치 편향성을 비판하며 설립된 KBS노동조합, 기존 노동조합이 정치 이념과 진영에 편향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설립된 같이노동조합—이름이—KBS공영노동조합 등 4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대략 지금 KBS 근로자 수는 5000여 명입니다. 그중 각 노조별 조합원 수를 보면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 2000명이 넘어요. 절반은, 과반은 안 됩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지요. KBS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아마 한 1000명 정도, 절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같이노조는 한 삼백몇십 명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이거는 작년 말 정도로 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도 이렇게 돼 있다.

32번, 그러면 MBC는 어떻게 돼 있냐?

MBC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 MBC지부 그리고 언론

노조와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의 일방적 탄압에 저항해서 만들어진 제3노조라고 불리는 MBC노동조합 그리고 언론노조의 가입을 거절당한 비정규직 출신 방송작가들로 구성된 차별없는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합원 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어서 여러 인터뷰나 소송 이런 데서 나온 걸로 간접적인 수치를 취합해서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2018년 4월에는 전체 1570명 근로자 가운데 언론노조가 1153명—압도적이지요—제3노조가 60여 명,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전체의 70%, 80%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뉴스의 핵심 조직인 보도국 취재센터의 경우에 2017년 12월 1일 당시 전체 127명 가운데 언론노조원이 66명, 제3노조원이 24명, 비노조원이 37명이었는데 같은 달 말에, 그러니까 제가 언론노조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해임된, 쫓겨난 뒤에 전체 111명 가운데 언론노조원이 109명 그리고 제3노조원과 비노조원은 각각 한 명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에는 전체 105명 전원이 언론노조원으로 한목소리만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이요.

MBC 언론노조원들은 MBC를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만 하면 사실 신경질적으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MBC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법원에서조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MBC가 제출한 노조원 관련 명부를 검토해서 한 판결문에 보면 경영진 대부분이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이다 이렇게 명백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영방송이라는 게 확실한 게 MBC가 법원에 제출한 다른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자료에 MBC가 소속 직원과의 쟁송 과정에서 현재 모든 보직 부장 및 팀장이 전원 언론노조원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보직자 명단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체 보직자 148명 가운데 132명이 언론노조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직자 명단이 언론노조원은 아닌데 그걸 반박하려고 낸 자료를 보니까 148명 가운데 132명이 언론노조원, 민노총 산하.

그런데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인사부장과 노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장 또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본부장들도 전부 언론노조원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언론노조원과 언론노조원이 만나서 언론노조원의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언론노조원의 징계와 같은 인사 문제를 언론노조원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징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이 법이 통과되면서 아마 고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노조가 아시다시피 경영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는데 사장 직속으로 경영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정책실의 실장과 팀장들 모두 언론노조원이었고 경영을 직접 책임지는 경영본부장과 정책기획부장도 언론노조원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는 뭐 당연하겠지요. 보도를 장악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도국 정치국제에디터, 사회에디터, 경제산업에디터, 탐사기획에디터, 디지털뉴스에디터, 뉴스데스크에디터, 정치팀장, 인권사회팀장, 경제팀장 전부 언론노조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보면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에

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게 실행이 되겠지요. 이 조항을 보면 그 자체로도 민간방송사들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간방송마저도 언론노조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MBC에서 발생했는데 2011년, 그러니까 이게 2021년 2월인데 이게 실행이 되면 눈에 보이는, MBC는 소위 앞서간 거지요. 2021년 2월 당시 MBC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 측 대표가 예능본부장, 시사교양본부장, 라디오본부장, 경영본부장이 모두 사 측 대표인데 언론노조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동수라 하는 게 결국은 의미가 없고 그냥 노전원이에요, 노전원. 노조 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원과 노조원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였던 건데 이거를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노조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다, 우리는 사 측과 종사자로 구분했다 이렇게 합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내용을 뜯어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통과될 법을 통해서 이게 실행이 되면, MBC는 이미 2021년 2월 당시부터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실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이미 이대로 간다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MBC 사장인 안형준, 당시 메가MBC 추진단장이었던데 그 당시에도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통과되고 방송 3법이 실행이 되면 이 언론노조가 언론노조와 인사, 경영, 보도 등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노영방송의 진정한 모습으로 모든 공영방송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영방송사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해충돌 문제 이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성 여부와 방송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심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 76%가 언론노조원이에요. 전체 방심위 직원 중에 휴직자·보직자를 제외하면 일반직 직원이 약 17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128명이 언론노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원들이 행한 방송을 언론노조원들이 심의하는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그냥 고착화되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 등원해 가지고 상임위에 배치받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퇴직금을 못 받아 가지고 MBC에 퇴직금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퇴직금 소송하는 사람이 과방위에 MBC를 상대로…… MBC는 사실 국정감사 기관도 아닙니다. 그 상급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국정감사 대상인데 그 방송문화진흥회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맡고 있는 과방위에 들어오는 것은 이해충돌 아니냐? 나가라…… 집중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이 전부 법사위에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이해충돌 아니냐? 말이 되냐?' 그렇게 했는데……

이해충돌도 거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냥 내로남불이더라고요. 자신들이 걸리면 아니야, 저희들 야당이 문제 조금 뭐 하면 그게 이해충돌이라고 공격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방심위 이거는 법을 잘 모르는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건 이해충돌 소지가 아주 명백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셀프 심의 아닙니까, 셀프 심의?

이런 폐단이 소위 언론노조원들이 서로 통하다 보니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의 언론노조원들이 류희림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원 신청인의 이메일, 전화번호를 구글링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명백히 수집한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자꾸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정보를 넘긴 것 중에는 IP라는 게 있다'. 아니, IP는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IP를 통해 추적했다. 그러면 IP는 어디서? 기자는 IP를 어디서 받았겠어요?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IP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인터넷주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발언을, 사실은 범죄행위인데 이것을 자랑하는 발언까지 하고 직업윤리와 보안 의식 이런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서 이해충돌은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이해충돌이야. 퇴직금을 MBC 상대로 소송하는 위원이 과방위에 있는 게 이해충돌이지' 이런 생각인 거지요. 그리고 개인정보법 이것 이렇게 되면 누가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했는데 이 수사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또 경찰이 흐지부지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정치적인 수사다, 편파수사다.

지금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이 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SKT의 해킹, 얼마 전에 KT 해킹 사태 또 롯데카드 정보 유출 보니까 거기는 카드의 CVC—카드 뒤의 번호 있지요—까지 유출이 됐는데, 개인정보라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류희림 고발하기 위해서 조금 그것 유출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조그마한 범죄,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또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굉장히 폭력적인 행태, 이것은 왜 제가 강조하냐면 국민 여러분들, 기자나 PD 언론인들을 굉장히 지성인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성인 맞겠지요. 그런데 그 지성인이라는 분들이 하는 행태는 굉장히 반지성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종종 드러난다. 그러니까 혹시 너무 그렇게 낭만적으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것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동영상인가요? 여기 본회의장에서 하는 동영상은 음성은 방송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좀 보십시오. 이게 2017년도 당시에 언론노조원 행태입니다. 언론노조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기자·PD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분은 YTN 기자입니다. 이것 이진숙 방송통신후보자가 청문회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과방위 앞입니다. 본청 과방위 앞에 들어오는데 저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싫기 때문에……

YTN 당시 사장한테 기자들이 침 뱉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다. 제가 전체 기자나 PD를 매도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십 년 전 예비군 훈련이 있던 시절에 멀쩡한 분들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심한 표현 아니고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중심리, 휩쓸려 가지고…… 아니, 아까 여기자가 욕하는 거 아주 쌍욕을 해요. 그리고 당시 YTN 최남수 사장한테 침까지 뱉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자나 PD는 아니겠지. 아니, 기자나 PD지요.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도하고 마이크 잡고 기사 쓰고 합니다.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일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문회 할 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사흘씩이나 청문회를 당하면서, 사실 총리도 이틀이지요.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께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까지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 했어요. 그것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모욕적인데, 아마 그것을 고소하셨나 그랬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가 있지만 방통위원장 후보한테 뇌 구조가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근데 그분이 나는 또 의사면허증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자격 의사가 뇌 구조까지 판단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화면을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후보자지요, 과방위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하고 언론노조위원장이 같이 서 가지고 저 화면 본 대로 난리를 칩니다. 피케팅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불편하게, 소위 경위들의 도움을 받고 들어왔지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위하는 게…… 이 본청 6층이에요. 이 국회의사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했는데, 그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고소·고발을 했을 거예요, 불법시위 그 자체를.

그런데 이것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님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 아닙니까? 오래전인데, 지금 이것도 경찰이 정권 바뀌었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봐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그게 일어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요? 1년 됐나요? 1년 가까이 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국무위원석에서)

7월 24일……

○김장겸 의원 1년 넘었네. 그런데 이것을 경찰이 그냥 뭉개고 있는 것 아닌지. 아니, 국회 경내 밖의 100m 이내에는 시위를 못 하는 게,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아까 그 YTN 노조위원장 출신 기자 하는 말 보십시오. ‘공중도덕 조금 하나 어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게끔 밑자락을 깔아 주는 게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 관련 법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4번 나와 있네. 이거 한번 보시지요.

사실 언론노조가 마음대로 하니까 약간 치외법권, 자기들이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 언론노조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IP 유출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당당한 모습 아닙니까? 과방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중도덕 좀 어겼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 아니

에요?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태도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는데.

제가 제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2017년도 MBC 사장에서 해임될 때 또 KBS 고대영 사장이 해임될 때 이분들이 폭력시위를 주도했습니다. YTN 최남수 사장 그 당시에 고생을 하셨고요.

35번.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폭력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이제 폭력을 쓸 이유도, 시스템으로 자기들이 다 장악하게 되어 있으니 폭력을 쓸 이유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분들의 폭력성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KBS와 당시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가 다니는 학교, 이대까지 찾아가서 시위하고 또 KBS 강규형 이사 같은 경우 명지대까지 찾아가서 시위하고 또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강규형 이사에게 집단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어요. 그리고 방문진 이사가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갔습니다. 교회까지 찾아가 가지고 교회 옆에 포스터 붙여 놓고.

36번 한번 볼까요.

명지대 앞에 가 가지고는 기자회견합니다, 강규형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명지대가 KBS 이사를 임명하는 데 관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관련이 없는데 거기 학생들 보는 앞에서 모욕감과 뭘 주려고 한 거지요, 모멸감을 주고 뭐 하려고. 다시 강조하지만 저 사람들 KBS 기자, PD, 엔지니어, KBS 직원들입니다. 언론노조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37번 보면, 김경민 당시 KBS 이사는 한양대학교 교수였어요. 한양대학교도 찾아가 가지고 또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그쳐요. 김경민 이사가 강의하는 곳 말고 김경민 교수의 제자의 직장까지 찾아갑니다. 농성을 벌이고 또 다른 이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를 가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MBC 방문진의 유의선 이사는 이화여대 교수였는데, 이화여대까지도 찾아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김원배 이사가, 이분이 목원대 총장 하셨던 분인데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이러면서 사퇴했습니다. 섬찟하지요.

앞서서 살펴봤는데, 38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폭력성.

소위 이분들이 지금도 주류화됐고 당분간 법이 통과되면 아마 상당 기간 마치 자기들이 방송의 주인인 것처럼…… 방송의 주인은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들입니다. 구성원들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경계의 대상입니다. 구성원들이 잘하고 있냐, 못 했냐를 국민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방송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성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데 아까, 그게 지난 7월이군요. 지난 7월에 아까 말씀드린 이진숙 청문회장 앞에서 언론노조 위원장과 MBC 지부장이 구호를 외치고 출입을, 자기들은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저기 보십시오. 아래쪽 보면 지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거를 출입 방해를 안 했다, 잠깐 서 있었고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격렬한 집회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영상에서 나온 대로 언론노조 당시 위원장이 불법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언론노조 YTN지부가 김백 사장 계속 압박했지요. 결국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김백 사장이 사퇴를 했는데 목적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민영화된, 사실 3000억 이상인가 써 내 가지고 유진기업이 YTN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민주당 주최 세미나 이런 데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 유진으로부터 빼앗아서 다시 공기업으로 만드는 게 소위 방송정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봅시다. 유진으로부터 빼앗아서 언론노조한테 주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방송정상화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겁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박탈 이걸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공영언론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전체주의나 소위 권위주의 국가 체제 아니면, 이게 민주당에서 그토록 싫어하는 전두환 정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정권이 언론 통폐합을 실시해 가지고 MBC도 공영화시키고 공영언론을 많이 다루고 만들어 내고 통신사도 하나로 만들어서 국영화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수십 년 동안 노조활동이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소위 노조가 주인이 되는 소위 그런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노조가 사실 이익단체 아닙니까? 노조가 공정방송을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이익이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뻑하면 들먹이는 BBC, BBC 노조 있어요. 노조 있는데 노조가 공영방송을 판단합니까? 단체협상 합니다. 하는데, 노조는 공정방송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단체협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언론노조를 통한 간접적인 방송장악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결, 완성시키는 작업이 방송 3법 통과에 이어서 방미통위법 통과다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39번을 보면, 언론노조의 이중성을 한번 보면 언론노조 구성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공정보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면, 지난겨울에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지요. 그 삭감 대상에는 방심위 예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방위 절대다수가 민주당 위원분들이니까 일방적으로 경상비를 30%가량 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방심위에서 모니터링 업무 이런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임차, 빌리고 있는 사무실까지 일부를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이 임금하고 업무추진비 삭감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세목 변경 불가' 이것을 명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 불가하다' 기재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전용하는 게 안 된다. 이게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게 문제잖습니까.

그런데 방심위 언론노조가 민주당 과방위원장님 방 앞에서 농성을 해야 되는데 방심위 위원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또 출동하고 그랬던가 봐요. 이것 소위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이익집단임을 자인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쪽은 민주당이나 진보좌파 진영에서 잘못을 했더라도 어쨌거나 책임은 무조건 보수우파

진영으로 돌린다 그런 거지요.

2017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보면 구성원들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언론노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충실한 파트너임은 역사적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40번.

작년 4월에 유진그룹이 YTN 인수 후에 첫 사장으로 김백 사장이 취임했는데 이분이 2027년 3월까지 임기 3년입니다. 이게 민간방송사인데 그런데 그만둬 버렸어요. 제가 이유를 못 들어 봤는데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만뒀어요. 민간방송사까지 정권이 바뀌니까 그만둔다, 이것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YTN 언론노조가 취임식부터, 취임 첫날부터 낙하산 사장이다, 그런데 이분이 YTN에서 기자도 하고 YTN에서 임원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김백 사장 반대를 외쳐 왔는데 그 압박하는 데 핵심 수법이 이렇습니다. 김 사장이 취임 직후 과거 보도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하자 용산을 향해서 엎드렸다, YTN 30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지요. 그다음에 또 7년 만에 지난 5월 28일 날 '유진 퇴출, 김백 퇴진, YTN 제자리로',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다시 노영방송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법적인 공세도 폈습니다. 지난 6월 1일 날 김백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마음대로 위반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행간을 읽어 보면요 민간방송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을 통해서나 아니면 임면동의제를 통해서 사실상 경영진이 인사권을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그런데 이걸 법을 통해서 대못을 박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하자 김 사장이 지난 7월 말에 전격 사퇴를 했는데 YTN 언론노조가 승리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지요.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민간방송의 사장을 합법적으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지요, 언론노조가. 그렇게 해서 계속 몰아붙여 가지고 사퇴를 압박을 해서 결국은 성공한 거지요. 성공했고 또 지금 그동안의 그 청구서를 언론노조가 내밀었던 게 방송 3법이고 방미통위법이고, 그 청구서대로 지금 이행이 완결되기 직전입니다.

41번.

언론노조가 보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주인이고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혹은 좌든 우든 혹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굉장히 동등한 잣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노조 성명에서 민주당 예산 삭감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항의조차 못 하더니만 그리고 방심위원장을 감금해서 사실상 협박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러더니 여기 성명을 보면 '수구 보수 궤멸의 몽둥이를 들겠다'…… 진보 좌파에 궤멸의 몽둥이를 들겠다 이런 성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노조원이었습니다마는, 부장대우까지 노조원이었는데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편향적인 정치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지금 하부구조까지 장악된 방송산업이 법 위에 서서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완결 직전까지 왔는데……

42번.

언론노조가 MBC 같은 데는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했지요. 장악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언론노조가 '방송의 공정성이 노동조건이라는 소위 근거다' 이렇게 성경처럼 떠받드는 바로 그 판결문인데, 이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은 근로조건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BC 단체협약을 보면 제24조제4호에서 '사용자는 공정방송이 중요한 노동조건임을 인정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MBC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중요한 노동조건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정해 놓으면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적법한 파업이 되는 것입니다.

적법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입법권이 있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사실 그것도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이게 여러 가지 위헌적인 소지도 많았는데, 그런데 어떤 행동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해석 권한이 있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언론노조는 자신이 적법한 파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그런 논리라면, 앞선 논리라면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언론노조가 상하부 구조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방송사는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한 구조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론노조 출신이 경영진을 장악하고 있고 노사 협상을 담당하는 회사 측 인사까지 언론노조원입니다. 결국 언론노조가 하고 싶은 파업이 있으면 언론노조와 언론노조가 만나서 규약을 개정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룰을 만들고 심판까지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있지요, 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사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10년 전부터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파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봉투법도 민노총의 일종의 청구서 아니겠습니까? 민노총에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이 비상식적인 판결이 정정될 기회가 있었는데 대법원에 상고된 이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났습니다. 즉 대법원이 이 판결을 다시 뜯어보고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언론노조원이 MBC의 사장에 취임합니다. 그래서 상고를 취하해 버렸습니다. 상고를 취하해 버리자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 있었으면 최승호 사장이 상고를 취하 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방송 3법이 실행이 되면 법에 의해서 또 부칙에 의해서 KBS 사장이 물러나고 이진숙 위원장을 필두로, YTN은 언론노조의 입김에 의해서, 연합뉴스TV도 사장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으로 상하부 장악이 완벽하게, 언론노조가 상부와 하부를 법으로 영구히 장악하게 됩니다.

43번을 보면 언론노조가 방송사 상하부 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한 결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고대영·김장겸 사장이 해임당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폭력시위,

아까 보셨지요? 그리고 사장이 새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MBC에서는 정상화위원회—이름 좋습니다—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무차별적인 소위 반언론노조 인사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내가 차차 말씀드리는데 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지요. 지금 법이 통과되면 아마 이런 체제가, 이런 일이 다시 또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하고 언론노조가 협력해서 조사 대상자를 사내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부릅니다. 말이 좋아서 정상화위원회지 인민위원회나 마찬가지지요. 아니, 회사에 감사실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와라. 그때 왜 그런 보도를 했느냐' 막 들입다 조지는 거예요. 족치는데, MBC는 정형일 당시 보도본부장이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사실장이 송요훈이라고 몇 달 전에 과방위에 나와서 저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을 해 가지고 위증죄로 고발이 돼서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 검찰에서 보완조사 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것도 정권이 바뀐 뒤에 보완조사 하라고 한 게 약간 좀 찝찝해요. 이것 명백한 위증이거든요, 나와 가지고. 그래서 소위 정상화위원회 조사 사무실로 끌려가 가지고, 불려 가 가지고 조사를 몇 번 받고……

국민 여러분, 소위 우리가 자유국가이고 민주국가인데 어떻게 저 MBC나 KBS 조직 내에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인권을 탄압하는, 아니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데 범죄자도 아닌 단순히 그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했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불러 제껴 가지고 들입다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대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대기 장소에 없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고 그래요, 무단결근으로.

이게요 과거에 방송사에서 일어난,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의 일이고 다시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마음 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얼마…… 전 정권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또 시비를 삼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게요 이런 게 아주 그냥 지성인 집단 조직에서 그것도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을 당한 수많은 기자들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못 견뎌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 놓고 답이 나올 때까지, 5일 동안 다섯 번 불러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요 요지는 그렇지요. 반복해서 묻는 게, 이게 일제 고등계 형사 비슷해요. 왜냐? '김장겸 당시 국장이나 본부장, 사장이 지시했다고 이야기나 해. 그러면 다 넘어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일제 고등계 형사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이 행위들이 결국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그중에 회사를 관둔 기자가 고소·고발을 합니다. 인정되고, MBC가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 언론노조의 불법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적시해 놨습니다.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2다22112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발췌하면 '원고 A는 비록 F위원회—F위원회라는 게 정상화위원회입니다—의 조사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그 사유를 소명하여 위 조사협력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앞서 조사에 불응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대기발령,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허위자료 제출을 이유로 징계 요청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조사에 출석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묻는 질문에 부인 답변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비위행위를 자백하도록 강요함으로써—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주리를 튼 거예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니, 정상화위원회에 소속된 MBC 정형일이나 송요훈이나 유상하나 자기들이 무슨 조사권·수사권이 있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F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원고 A에게 행한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은 곧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원고 A는 F위원회의 조사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동료 기자들처럼 대기발령,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2018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다섯 차례나 조사에 응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오히려 수사의뢰, 중징계 등을 수단으로 하여 비위행위를 시인하도록 강요받았고 이와 같은 절차적 위법행위가 개입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11월경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것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려고 하면…… 아니, 회사에 조직적인 감사기구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감사실에서 조사하면 되는데 갑자기 정상화위원회?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법적인, 소위 '너 그동안 말이야 너무 언론노조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반언론적인 보도를 해 왔어. 너 한번 당해 봐' 이것 아니겠어요?

'원고 A가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지는 않았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동료 기자들 중 상당수가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징계 처분에 대한 압박과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A는 결국 2019년 12월경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서 약 19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스스로 떠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노조와 언론노조가 장악한 경영진이 원했던 겁니다.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실 1000만 원 너무 약하지요. 그 모멸과 수모를 당하고 배상받은 것은 1000만 원 받고 회사도 결국 사표를 썼는데. 이런 일이요, 이런 일이 이제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송사의 상하부 구조를 언론노조가 장악하면 반대파의 이른바…… 기본권하고 인권은 가볍게 짓밟는 모습 아닙니까. 비판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자, 44번.

제가 이걸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했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제가 사장 때도 상당히 그 문제를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방송사에 사실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고 비정

규직이 없으면 또 방송 제작이나 프로그램 제작이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거를 또……

황정아 의원님, 문이 열렸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이게 보면 임금 협상은 과반 노조인 언론노조하고 하는데 사실 방송사의 수익 구조가 갈수록 OTT 등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임금을 현실화시켜 주기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짧은 기간 CEO를 해서 그 문제, 고민을 내가 회고록에 잠깐 쓴 적은 있는데.

최근에 보면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사건으로 비정규직…… 기상캐스터, 비정규직이지요.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점화가 되고 지금 고 오요안나 모친께서 MBC 앞에서 끝이 없는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 오요안나 문제는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지만 저는 그 안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도 격차를 좁혀 주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니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직들이 임금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양보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저는 좀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사장을 관뒀는데.

이게 광주MBC 프리랜서 아나운서 사례인데,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상하부 구조를 모두 장악해서 발생한 독주 피해 사례가 광주MBC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민의식이 있는 거지요. 애초부터 그런 거를, 저도 어차피 수습기자로 들어가서 대부분의 간부를 다 거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데……

이 예는 광주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상 근로자였던 아나운서가 회사와 3년여 끝에, 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언론노조의 텃세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해당 아나운서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는데 광주MBC와 3년여의 분쟁 끝에 근속연수를 대폭 삭감하면서 근로계약을 맺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론노조가 이 결정에 자신들하고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거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에게 어떻게 보면 언론노조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과 사전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텃세를 부렸다고 그래요. 해당 아나운서가 2022년 8월에 노동청에서 근로자 판정을 받았는데 3년여가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언론노조의 몽니 탓에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당 언론노조 지부장은 만남을 계속 피하고 있고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고용 과정에 조합원 근무 환경에 변동이 생기는 일은 없는지 감시하는 것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러는데, 상하부 구조가 장악하게 되면 이게 견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의 권익보다는 혹시 모를 조합원의 손해 발생에 더 신경 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고 오요안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5번.

모친이 지금도 상암동 MBC 앞에서 20일째인가요 진상규명, MBC 사과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인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노조 독주의 피해자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분, 이 모친이 저희 과방위 현안질의에 나오셔 가지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MBC 관계자들은 현안질의에 대거 불참했는데 아마 경영본부장인가가 나와 가지고 사과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실된 사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MBC가 고 오요한나 모친이 20일 넘게 단식 투쟁을 이어 오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협상 시늉만 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결과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고용노동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혹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MBC는 물론 방문진 이사회에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 지금 이 방문진 이사 자리를 임기가 끝났음에도 1년 넘게 지키고 있는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기능이 방문진에 있는데 이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또 가해자들로 지목된 분들은 또 한때 방송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론노조가 제 식구 감싸기…… 왜냐하면 거기에 배후로 지목된 사람이 기상캐스터로 들어와서 계약직이 되고—뭐 본인은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또 정식 직원이 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원이 소위 굉장히 언론노조원이다. 언론노조원이고…… 언론노조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영방송의 편향·편파 사례는 사실 너무 많지요. 선거 때 되면 타이밍 잡아서 나오지요.

46번을 보면, 그러니까 비판세력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적 다원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다원성이 확보되지 않고, 과반 이상이 언론노조원이고 또 경영진조차도 언론노조원들 출신이 잡고 있으면 이런 게 아마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보면 지난번 22대 총선 사례인데요. MBC경남 뉴스투데이 프로에서 '조국혁신당 돌풍 경남에서도 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보도하고 또 소위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5번 정혜경 후보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정혜경 의원이 경남 출신이라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하다고 한다면 다른 비례정당의 경남 출신도 하나씩 소개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체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저도 경남 출신인데 일체 언급 않고.

그러니까 이게 도 넘는 불공정 보도지요. MBC의 이런 불공정 사례는요 무슨 본사와 지방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 47번 볼까요.

이번에는 울산MBC 이야기인데요. 울산 북구 후보자를 다루는 꼭지에서 민주당은 36초를 할애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른 당과 합쳐 가지고 딱 2초 보도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울산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것은 그냥 대놓고 하자는 거지요.

대전MBC 뉴스데스크 볼까요. 1월 31일 자인데, 48번.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이 0%라고 보도를 해요. 그런데 항의를 했겠지요. 3일 뒤에 정정합니다, '21대 총선 공약 정상 진행 중'. 총선 공약 이행률이 0%라면 좀 검증을 해 봐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항의가 들어오니까 '어, 아니네', '정상 진행 중' 이렇게 며칠 뒤에 정정보도를 합니다.

49번 보시면, 오래된 청와대 거울방 그것을 또 올해 4월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권순표 기자, 편향·편파 보도로 아주 악명이 높지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를 유포합니다. 이것 오래된 건데 사방이 거울방이 아니고 거울이 한쪽 벽면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거울방 자체라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게 이미 2017년 5월에 처음에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 입을 빌려 가지고 나왔는데, 가짜뉴스가 보도됐는데 이것을 8년 지나 가지고 사실이 아닌 사실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정정보도를 하든지 고치든지 '바로잡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50번.

그동안 소위 언론노조가 지대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MBC 사례를 보면 광우병 같은 경우 보면 미국산 소고기는 공기로도 전염되는 광우병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왜곡 보도 했고요.

이게 보면 사실 가짜뉴스 편파 조작, 편향 보도 증폭기라고도 할 만합니다. 검언유착, 검사와 기자의 유착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고 또 민언련이라고 하는 진보 좌파 언론단체 쪽의 입김이 또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 됩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지요. 그러니까 짜깁기된 걸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거론된 민언련이 대선 전날에 성명을 냅니다. 아직까지 보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MBC·KBS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아직까지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가 두 군데 있다. 그게 TV조선하고 채널A였습니다.

그러면 TV조선과 채널A가 보도를 안 했을까요? 겁나지요. 겁나 가지고 결국 보도를 했습니다. 대개 거기도 선거방송 준칙이 있을 텐데, 확인되지 않은 것은 선거 임박해 가지고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선거방송 보도준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해요, 다 해. 민언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4만 달러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위 말이 좋아서 공영이지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 아니, 사장은 길어 봐야 3년이고 또 정권은 5년마다 바뀌고 또 길어 봐야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노조의 간부들, 원로원화돼 있는 쪽은 굉장히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조가 주인이 되는 그런 회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견제 세력이 없어지는 게 제일 큰 약점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공정방송을 판단하는 판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만한 생각이지요. 사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감시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의 내부 경영진과 하부구조 전체를 언론노조 출신이 잡게 되면 그게 무슨 비판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그래서 51번 경영권 장악 문제점을 한번 보면요, 최승호가 MBC 사장이 된 이후에, 언론노조 출신이지요, 제가 2017년 11월에 해임됐는데 12월 7일에 최승호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모두 박탈했다 이렇게 소위 제3노조 직원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급작스럽게 옮기게 된 편성국에서 맡게 된 업무는 주조정실 MD였다'. 그러니까 MD라고 그러면 방송 종사업계 종사자들은 다 알 텐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낮 근무, 밤샘 근무를 이어 가는 근무 형태로 닷새마다 꼬박 밤을 새워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병을 얻었다'. 보통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 좀 바꿔 주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소위 시쳇말로 찍혀 있으니까 안 바꿔 줬겠지요. '6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병을 얻었다. 눈의 망막이 떨어져 나가 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2번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또 다른 직원입니다. '최승호 사장 취임한 그날 특파원 강제 전원 소환 통보 후에', 그러니까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는 특파원들을 전원 소환시켰습니다. 그 이유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김장겸 사장이나 그 전 사장 시절에 특혜를 받았고 이런 시비조지요. 그리고 언론노조원 출신들을, 언론노조 열성 노조원들을 다 특파원으로 보내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파원이라는 것은 저도 갔다 왔지만 이게 개인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전부 가는데요, 자녀가 어리면 학교부터 시작해서 생활 근거지 뿌리내리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대개 3년의 임기를 주는데 부임한 지 넉 달 만에, 강제 전원 하는데 그중에 넉 달 만에 다시 또 끌려온 특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 직원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낮에는 회사에서 1노조원(언론노조)의 무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잠을 줄여야 했다. 결국 몸이 반응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큰아들이 물었다 그럽니다. '최승호가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느냐? 최승호가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면 자신을 (아들이) 사내 식당으로 불러 달라는 부탁을 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최승호의 뺨을 한 대 때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2017년, 2018년에 벌어졌는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아예 견제할 수단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3번이요.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 MBC 경력 기자 채용을 통해서 방송기자로 입사했다. MBC 입사 이후 사회부에서 기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저는 2017년 12월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국 사회2부 수원지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유야 뻔하지요.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 그리고 김장겸 퇴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는 모두 출퇴근 4시간이 걸리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에 2012년 입사자들', 그러니까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언론노조가 대대적으로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입사자들이 언론노조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파업하는데 너희들이 경력 기자로 왜 들어오냐 이거지요.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 위협을 해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 비전 클래스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임신 사실을 알았고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찾은 산부인과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유로 아이가 유산됐다’ 그래요. 그래서 ‘MBC 구성원으로 버텨 보겠다던 저는 참담함과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구성원 다수라는 무기를 당연히 여기는 제1노조에 지배당한 MBC. 그리고 다수인 제1노조원이 아니라고 저는 방송기자라는 직무를 빼앗겼습니다. 소중한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KBS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방미통위법이 통과되고 해서…… 아, KBS 사장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그러더만요. 부칙에 사장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렇게 이사들이 재임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통과된 방송법에?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데 KBS 사장·이사들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그래요.

54번.

KBS도 지금은 언론노조가 과반은 아니지만 제1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결국은 언론노조 출신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여러 가지 이사들 구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KBS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비판한 흑서가 발간됐는데 거기 가운데를 보면 ‘김의철 사장과 손관수 보도본부장, 김현석 보도국장 등 KBS 현재의 보도를 무기력하게 이끄는 보직자들은 당시 보도국을 돌면서 파업을 참여하지 않고 있던 선후배 동료 기자들 가슴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역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넣었다’, 그러니까 그 파업이라는 것은 고대영 사장 축출 파업입니다.

그리고 55번이요.

언론노조 소속 박태서 기자가, 이분이 지금 아마 어디 국회의장실에 있던가요. 박태서 기자가 ‘사장이 던져 준 보직에 감사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하고 있는 당신들이다.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 부역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어요, 부역.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냥 부역자 명단도 발표한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언론노조에서? 아니, 부역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쓰나 해서 내가 어학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부역이라는 게.

그런데 언론노조에 반대했다고 국가에 반대한 겁니까? 그리고 부역자 명단이라고 막 발표를 해요. 언론노조에서 발표했지요? 그런데 박태서 당시 KBS 기자가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 정확히 표현하면 언론노조에 반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어요. 부역이라는 말 섬찟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제 고등계 형사나 혹은 북한에서 섬찟하게 쓰는 말 비슷하게 어떻게 국가에 반역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그리고 70명에 달하는 보도본부 기자들의 실명을 나열한 성명서를 올렸답니다. 이 명단이 부역자라고 하는데 사실 살생부지요. 90% 이상이 보직을 박탈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진격했습니까? 자신들이, ‘우리가 정의로운 보도를 한다’ 이러면서 언론노조원들이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56번.

그리고 제 뒤에 최승호 그다음에 박성제가 MBC 사장이 됐는데, 둘 다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 사장이 됐는데 최승호는 어떻게 했냐 하면…… 국민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입사했더라도 진급이나 승진에 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일한 분이 있고, 또 옆에서 시샘을 받겠지요. 저 친구는 능력도 없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는데 왜 승진하느냐 하지만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요.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최승호는 사장이 되고 난 뒤에 그랬다 그래요. 입사 연도를 딱 정해 가지고 그 입사 연도, 예를 들어서 90년 입사다 그러면 부국장부터 부장 그다음에 차장까지 다양하게 직급이 형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전부 부장으로 만들어'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국장은 갑자기 부장이 되는 거예요, 직급이. 차장, 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들이 원하는 조직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짐작을 할 텐데 PD 중의 하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주는 PD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어요. 저희가 제 앞 사장 때부터 인센티브를 좀 줬어요. 인센티브를 급여의 한 두세 배 줬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회사를 나가면, 다른 기획사에 취직하게 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고 해서 그게 됐는데 최승호 사장이 들어온 이후에 '아니, 뭔데 말이야—말은 이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취지겠지요—뭔데 돈을 많이 가져가?' 그냥 감축을 해 버렸대요. 그런데 그 친구, 그 PD가 결국 회사를 나갔지요.

이런 일이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법이 통과되고 하면 이게 영구 고착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 떨어진 경쟁력의 수익 악화나 결국은 무슨 정부 광고 협찬이나 정부 협찬이나, 소위 프로그램의 질을 올려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협조해서 협찬금을 받아 내거나 혹은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드라마 중에 지상파에서 제대로 만들어 내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자체가, 사실 제작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요.

박성제는 사장을 했는데 보도국장 시절에 아주 명언을—명언이라고 할 수 있지요—남겼지요. 조국수호 집회를 봐서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괴담 장사꾼 아저씨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아마 했지요, '딱 보니 100만 명'.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채신머리없이 어디 유튜브에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무슨 현직 보도국장이. 그리고 소위 조국수호 집회를 어떻게 과학적인 검증 없이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딱 보니 200만 명까지 올라갔다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저널리스트의 기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영진에 오면서 사실 안에서 내부 차별, 언론노조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내부 차별 혹은 김장겸, KBS는 고대영 사장 퇴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행위, 이건 눈에 봐도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복행위를 주도했는데 지금 재판이 아마 일심 끝나고 이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소위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그 서부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최승호, 박성제, 아까 말한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보도본부장 정형일하고 몇 사람이 아마 재판 같이 받고 있을 텐데, '피고인들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판시와 같이 상

당수 MBC 노동조합들을 소속 노동조합을 이유로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MBC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였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으로서 소속 직원 내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이에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조합원들 및 해당 노동조합이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사건 인사발령에 의해 취재 업무로부터 배제된 MBC 노동조합 조합원—이것은 제3노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론노조원이 아닌—등의 규모나 그와 같은 인사조치가 유지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제대로 공영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100일인데 이런 소위 비판적인 지적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앞으로 방송이 장악이 되면 이런 건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는데……

3대 특검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정부조직법에서, 이미 어저께 통과가 됐지요. 그런데 특검에는 둘 다 다 줘요. 특검에는 둘 다…… 아니, 도대체 수사·기소 분리하자면서 특검에 둘 다 주는 행태, 이런 거를 지금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제대로 지적된 거 여러분들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과문해서 그런지 보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장악 문제도 그래요. 이게 보면 지금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변경, 법관 평가제도 변경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결국은 독재의 서막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법부 장악해 가지고…… 용산인가 어딘가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고 누가 지인이 보내 주던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국회의장, 이재명 대법원장 다 하시라든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된 공영언론이라면 이거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증원되는 만큼의 대법관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임명을 통해서 사법부 완전 장악하겠다.

이게 사실 베네수엘라 사례를 드는데 2004년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서 당시 좌파 정부에서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재판관만 임명해서 언론 및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는 거예요.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걸 지적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대법관 추천방식 변경을 해 가지고 친민주당 단체의 입김 강화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임명될 우려가 높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시민단체하고 민변 등을 통한 법관 평가하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좋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인사 보복을 현실화해서 법관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공영방송에서 목소리를 지적한다, 이걸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나라가 균형을 되찾지 않나.

아니, 검찰 폐지법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통과시켰는데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명백히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기소 강제 분리, 이거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지금 보시면 겁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 정권에 찍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직접 기

사를 쓰고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언론노조원들이니까 중점적으로 보도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방송 3법 통과시키고 오늘 방미통위법까지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MBC나 KBS에서 제대로 중점적으로 심층 있게 보도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찬사의, 내가 MBC 보니까 아주 이거 참 잘됐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MBC 방문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미통위법이 최민희 의원안과 김현 의원안이 2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제정법이고 또 하나는 소위 개정안법인데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을 하려면 제정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겠지요. 그런데 방미통위 위원을 9명으로 둔다, 5명으로 둔다 두 법이 충돌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냥 절충해서 7명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졸속적으로? 그런데 그 7명에 무슨 근거가 있냐 하니까 7명의 근거가…… 내가 속기록 보여 드릴까?

여기 보면 이훈기 위원님이 '인원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요. 김현 의원님 안은 5명이고 최민희 의원님 안은 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과 비상임의 비율을, 지금은 5명이 다 상임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6명을 비상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추천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주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제가 7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내가 찾지를 못하겠네—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노종면 위원께서 정확히 왜 7명인지에 대한 답은 뭐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정답은 없다……)

예, 정답은 없다 그랬지요.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숫자에 정답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숫자의……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제가 드린 얘기가 같은 말입니까?)

내가 다시 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7명이 왜 7명인지,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왜 7명인지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 5명, 절충해서 7명……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조직의 성격과 내용에 맞춰서 7명으로 조정했다라는 답변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지요, 그러면?)

예?

(○김현 의원 의석에서 — 김장겸 의원님이 수용하지 않으신 거지요, 저희의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7명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7명이 왜 7명이냐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현 의원 의석에서 — 7명이 왜 7명인지……)

(○조은희 의원 의석에서 — 정답이 없다는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좀 들어 봅시다,

김현 간사님.)

(○김현 의원 의석에서 — 못 찾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아, 여기 있네.

(○조은희 의원 의석에서 — 설명 필요 없어요. 본인이 찾으면 되지요.)

(○김현 의원 의석에서 — 못 찾았잖아요, 지금. 법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우원식 자, 두 분 의원님들 지금 토론자가 무제한토론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들으시지요.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못 찾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 문제니까.)

거기서 얘기해 봐야 국민들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조은희 의원 의석에서 — 천천히 찾으세요.)

○김장겸 의원 천천히 찾겠습니다.

그날 제가 소위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취지는 들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7명이 정확하게 왜 7명인지 이게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5명, 9명 뚝딱 절반 7명.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숙의 과정을 거쳐서…… 아니, 이게 합의제 기구인데 7명 중의 3명이 상임이고 4명은 비상임이란 말이에요. 사실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상임위원은 김현 의원께서 말한 대로 심의 의결에, 무슨 논의에다 참여하지만 비상임위원은 심의 의결에만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투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 결정의 의사구조 참여의 비대칭 그거는 합의제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땡전뉴스 뭐 이렇게 민주당과 진보좌파 진영에서 그동안 굉장히 비판을 해 왔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8·15에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취임식 그것을 방송 3사가 일제히 중계방송하고 심지어 KBS 같은 경우에는 1TV를 넘어서 2TV까지 생중계를 채널을 바꿔서 했는데 이게 소위 땡명뉴스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중잣대고요, 정치 편향 심화가 우려되는 겁니다. 공영방송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법이 통과되면 SBS, YTN 등 민영방송에 대한 노조 영향력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가 또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노조라는 데가 권리를 주장하는 데지 책임을 지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권한은 많이 주게 되는데…… 그리고 소위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부칙으로 넣어 놨는데 이게 초유의 사태고 위헌 입법입니다. 사실 다양한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게 공영방송의 책무인데 이 방송 거버넌스 개악이 이것을 통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말살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언론중재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큰 밑그림하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보면 9월 5일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언론중재법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고의적 왜곡·허위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재추진한다. 그

리고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언론에 최대 10배가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인용·매개 보도, 유튜브와 SNS까지 포함된다 이렇게도 하고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 발생 시에 손해액의 배액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하는 배액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8월 14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한 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이것 21대 때 추진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곧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8일 자에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나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 신속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말은 맞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소위 잣대가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렇게 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움직임이 언론사의 과도한 자기검열 강화로 언론자유 훼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고요. 보니까 언론인 단체도 민주당의 이런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사회적 숙의를 통한 시민 피해구제 확대 그리고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것 단순히 방송장악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방송에서도 중립적으로 보지 않고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여당이 늘 협치를 한다고 대통령은 이야기하지만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통과에다가 심지어는 논의조차도 제대로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 계속 야당에 대해서 해산 겁박만 하고 있지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법안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말까지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혹은 진영 갈등, 국민 분열 심화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8·15 서울 광화문광장 국민임명식 말이지요, 이것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KBS에서는 압력으로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8일 날 1차 편성표가 완성됐는데 8월 13일 날 편성표가 바뀝니다. 8월 13일 날, 방송 이틀 전인데 2TV에서 식후 행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땡명뉴스의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두 번째 취임식이 경청과 통합을 내세웠지만 협치를 외면한 반쪽짜리 행사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이게 공영방송 보도에서 제대로 보도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3사가 다 이것 중계방송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을 되돌아보면 광복절 특사로 조국 일가, 입시비리 주범이지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한 윤미향의 사면. 이 대통령 사면권 발동이 적절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정권하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으면 아마 MBC, KBS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지금 추진한다 그러지요. 지금 공공기관 보면 EBS 유시춘 이사장은요, 지금 이분은 천 몇백만 원 법인카드를 횡령한 혐의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님 법인카드 해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려고 계속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야기하는데, 경찰이 검찰에 넘겼다는 기사도 봤는데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거든요.

유시춘 이사장은 160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횡령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분 아닙니까?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EBS 사장 김유열, 역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장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말고도, 과방위에 소관한 분들만 이름을 거명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정말 내로남불이지요. 공공기관 임원을, 소위 지금까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자그마치 59명의 기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전체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86%가 문정부 추천 인사로 채워지고, 이게 그야말로 알박기를 막 남발하고 간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블랙리스트로 환경부장관이 실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내보내야 할 사람……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법 개정을 통해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도 합법화시키려고 시도 중입니다.

지금 사실 똑같은 일환이지요. 이진숙 위원장 부칙을 통해서, 방통위법 개정을 해서 부칙에다가 그거를 넣어 가지고…… 사실 법이 내용이 달라진 건 없는데, 제정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 게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몰아내려고 지금 그 법을 폐지하고 새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위인폐관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위인설관은 들어 봤는데 아마 위인폐관은, 이진숙 위원장을 표적으로 아예 정부조직 자체를 하나 폐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진숙 위원장님, 대단하긴 대단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까지 민주당에서 하는 것 보니까 대단하긴 대단하신 모양인데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운영법이 또…… 미리 붙이겠지요, 그러면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대며. 아니, 국정철학이 맞아 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때도 계속 있었습니까? 정말 말 안 되는 사유를 붙여 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를 한 번 했는데 OECD 국가 가운데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그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OECD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기관장 임명은 선거 주기와 무관하게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적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임기가 불명확하고 또 정권에 따라 자주 변경되면 경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미사여구를 막 동원하지

요,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교체돼야 된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 당에서도 이런 걸 듣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봤어요.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고 또 그야말로 내로남불, 이중 잣대 아니겠습니까?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59명이나 기관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때 임명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 말도 않고, 나가라고 압박해서 안 나가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낸다? 국민 여러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관장의 임기 그런 거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기관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일괄 교체할 경우 공공기관은 정권의 놀이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냐. 지금까지 그렇더라도 잘못된 건 바꿔야지요.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방송사는 더하지요. 아니, 무슨 제삼세계도 아니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나가라고 압박을 하다가 안 나가니까 법을 바꿔서 KBS 사장을 몰아낸다? 아니면 언론노조 구성원을 동원해 가지고 온갖 폭력 사태로 몰아낸다? 아니, 이게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방송의 날 2017년 9월 1일이었나요, 체포영장이 발부됐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가 막힙니다. 저보고 나가라고 압박을 계속하고 언론노조원들이 시위하고 집 앞에까지 찾아오고 난리를 치고 방문진 이사들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가 있냐 찾기 위해서 특별근로감독을 보냅니다. 특별근로감독을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연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청에서 찾아낸 게 뭐 몇 가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사장 재임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본부장·국장 시절까지 다 뒤졌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그때 처음에 노동부에…… 자꾸 그런데 노동부에 CEO를 출석하라고 그래요. 사실은 전결사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고 설명할 거 다 하고 자료제출 다 했는데도 끊임없이 사장이 오라 이거야. 그러면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알려 가지고 망신 주려고 하는 의도 그거 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료제출하고 다 했지 않냐고 했더니만 노동청에서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체포영장…… 안 나온다, 이 사람. 안 나오니까…… 현직 공영방송 사장이에요, 현직 공영방송, 당시에. 그 체포영장을, 제가 MBC 사장이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거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도 정말 이해가 안 되지요. 그걸 한 거야. 그래서 방송의 날 행사에 갔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지요. 그런데 내가 원래 개인적인 다른 약속이 있어 가지고 1부 행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겨우 빠져나왔지요. 그런데 또 도망갔다고 난리를 치고 집에 있었는데 어디로 나갔다고 별별 선전선동에 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찍어내기를 했던 민주당과 좌파 정부가, 좌파 진영이 이제 와서 국정철학 운운하면서 알박기, 그렇게 해서 알박기를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알박기 인사라고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좀 세련된 것 같아요, 법을 바꾼다든지. 소위 언론노조원들의 폭력에 대한 국민적 시각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뭐 정권이 이렇게 됐는데 굳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압도적인 의석으로 온갖 법을 다 만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

겠지요.

이것 어제 통과됐지요. 민주유공자 예우법, 국정과제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사실 선배 의원들 이야기 들어 보면 여러 차례 올라왔다고 그래요. 올라왔는데 폐기되고, 폐기되고 했는데 소위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이런 거를 했으나 21대 국회 말에 민주당이 또 단독 처리했는데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이런 것 정도 할 것 같으면 민주유공자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유공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것 충분히 사실 야당의 의견을 좀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패스트트랙에 어제 올라갔지요, 법 통과된 것은 아니고. 패스트트랙을 어제 지정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속도전을 낼 것은 뭐 있습니까?

사실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그리고 국민이 존경해야 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점입니다. 민주화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 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에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지적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기후대응댐 추진 폐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재명 정부의 환경분야 공약이 4대강 재자연화지요. 그래서 보 해체를 고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4대강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홍수 예방 차원이나 혹은 영산강 같은 데는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지사가 직접 영산강을 공사해 달라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수하고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조건을 건 백지화 입장이나 이런 입장을 자꾸 내는데, 이것은 이상기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가뭄·홍수 피해가 일상화된 현실에 적절한 대책이, 그런 분들한테 물어본 건지, 그러니까 가뭄과 홍수에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대비해도 부족한데 이게 국민 안전하고 민생을 너무 담보로 한 것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공영방송 데스크라면 이런 것을 한번 짚어 보겠어요.

지금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 강행처리 했는데 이게 소위 재계하고 기업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 우려가 심했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도 우려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수많은 네이버 하청업체에서 원청 네이버를 상대로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게 벌써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 제가 CEO 출신으로서 배임죄는 완화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강행처리 하면서 갑자기 또 기업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러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이런 데 지금 배임죄로 엮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배임죄가 폐지가 되거나 하면 제일 먼저 혜택을 받는 게 이

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퇴임하고 난 뒤에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면소 판결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이거 노조에 대한 건 해서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걸 통과시키고 또 그러고 난 뒤에 노란봉투법 해서 이게 아마 공영방송에도, 민영방송에도 앞에서 제가 지적한 대로 파업이 지금도 사실은 경영진을 퇴진시키기 위한 그런 파업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계속해 왔는데 이거 이제 계속하는 거지요.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언론노조가. 그렇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그런데 그래 놓고 배임죄를 폐지해서 마치 기업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는 예외로 한다든지…… 민주당, 부칙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칙에 정무직 승계 이진숙 혹은 다른 방송사 사장, 공영방송사 사장을 다시 뽑는다든지 이런 거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칙에다가 그렇다면 '아니, 그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부칙에다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넣든지. 이런 것도 제가 문제시하고 의문점을 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부동산 값이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요 보면 공영방송에서 사실 제대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라벨갈이 수준의 재탕 정책 평가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무책임한 LH 떠넘기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인가 기사를 제가 봤는데 다시 약효가 떨어졌는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기사를 어디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 원리를 외면하고 공공 주도, 공공 소위 공영 이거 너무 좋아하다가는요 방송도 망치고 주택정책도 망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청년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966만에서 879만. 그런데 쉬었다 청년은 늘어났어요, 36만에서 40만.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감소했으면 이것도 사실 감소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특히 지난 두 달 전 7월 쉬었음 청년은 42만 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기침체 탓에 고용을 줄인 데다가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한 결과인데 이런데도, 사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 저하 그리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책이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데 소위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고 이러니까 더더욱 이것하고 같이…… 기업이 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 100일 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를 보면 농축산물은 작년 동월 대비 4.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6.2% 상승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수치인데, 그럼에도 계속 돈은 풀고 있지요. 며칠 전에도 또 10만 원씩 풀었지요. 그래서 밥상 물가하고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작년 10월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업 생산은 들쭉날쭉하다. 그런데 정부는 가격이 폭락하면 모른 척하고 폭등하면 수입하는데 농민은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라면서 정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

잡고는 소위 달라진 것 없이 침묵과, 민주당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배임죄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2012년 트위터를 보니까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굉장히 비난했더라고요. '배임죄를 폐지할 바에야 무슨 기업을 하냐, 개인 뭐를 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오니까 저도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본인 면소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겉으로는 포용 금융, 생산적 금융이라고 포장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입김이 금융권에 강하게 작동되어서 이게 소위 이른바 갹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데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민간 금융권 참여를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서슬 퍼런 정권에 참여 안 할 금융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서 생명과 손해보험 업계 각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금융권 4000억 원 출연 예정이다. 그리고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연 수익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리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은행 대출금리 신청 시 법정 비용 반영 금지다.

그런데 이게 참 또 내로남불인 게 지난 정부 당시에 은행의 과도한 금리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관치금융이라고 민주당이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출연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 아닙니까? 이런 것도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과 방송이 살아야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이고 또 충분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노조의 언론장악 최종 목표가 뭔가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7번.

민노총 정치노선 관철을 위한 언론의 도구화 그리고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 카르텔 형성으로 방송·언론 장악 그리고 편집권 독립 명분으로 실질적 경영권 확보 시도, 방송 3법을 통해서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장악 법제화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지금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이게 완결이 되는 것이지요.

방송 3법은 단순한 소위 방송 개정법이 아니라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언론장악·방송장악 시도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왜 이분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 관련해서 거기 소관이니까. 방송 3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이분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 줬는데……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굉장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나 행적이 아주 화려하지요. 2012년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천

리마운동, 비날론 등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현재의 방송 3법·상법·노란봉투법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기업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책임진다고, 경영이 잘못됐다고 노조위원장이 나가는 것 봤습니까? 노조위원장이 그만두는 것 봤습니까? 그냥 권한만 있고 그렇습니다.

(「해고시키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예?

(「해고시키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부터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왜 이진숙 축출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률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제안이유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는 주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법안의 주요 내용 등 입법목적을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 문단도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법안의 엑기스가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 법해석이나 입법목적이 쟁점이 될 때 이 법안 제안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의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통신 분야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부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 제안이유를 달성할 수 없는 졸속입법임을 보여 주고 있어요.

58번.

방송·통신 분야의 거버넌스 변화는 역사를 보면 일원화됐다가 또 이원화됐다가 이런 논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이원화 형태에서 일원화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원화 형태에서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통신 분야의 거버넌스 체계는 총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고 그때마다 충분한 논의와 숙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에서도 특위가 그때 구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제정안은 2013년 여야 합의로 개편된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 분리 체계를 다시 일원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도하고 있음에도 국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청문회는 물론이고 TF를 통한…… 전문가 청문회는 과방위에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익단체 관련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청문회는 없었습니다. TF를 통한 논의나 여야 간 합의와 같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 절차가 전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

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단 하나지요. 이진숙 위원장 축출,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입안되다 보니 법안 자체가 누더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59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이유에서는 방송·통신 분야 정책 이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일원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안에서 보면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통신에 대한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을 분리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이원화 모델도, 방송과 통신을 합쳤던 이명박 정부의 일원화 모델도 아닙니다. 이게 애매한 거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진숙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방송 진흥 및 규제와 통신의 규제를 묶고 과기정통부에 통신의 진흥 사무만 남겨 둔, 그러니까 업무분장의 기준도 명분도 없는 희한한 거버넌스 체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부분을 제외했다고 했는데 지금 미디어 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게 OTT입니다. 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인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의 모태라고 할까요? 처음에 민주당 안에서 제출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 그 이름이 소위를 거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으로 바뀌었는데 역시 그 제안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OTT의 급속한 성장을 언급하고요 ‘OTT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법에서도. 이게 소위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름을 방송미디어로 바꿨는데 그 법에서도 그렇게……

그런데 이것 보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오직 이진숙 위원장 축출을 위한 목적만으로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OTT의 관할과 정책 추진 주체에 대한 정부부처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심사 과정에서 OTT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법안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지금 통과시키는 분위기고 그렇게 또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진숙 위원장 며칠 더 있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법안을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의 목적이 정말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OTT의 그런 걸 비롯해서 그런 목적이라면…… 그리고 여당으로서—이제 여당이잖아요—일말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소위 심사 과정에서라도 정부부처의 의견을 제대로 좀 청취하고 소위 국민과 관련 기업, 이게 관련된 기업이 기업협회도 그렇고 굉장히 많지 않아요? 또 기업 형태에 따라서 각각 입장도 다릅니다. 그런 숙의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엇이 급했는지 OTT를 제외합니다. 핵심을, 속된 말로 앙꼬를 뺍니다. 앙꼬를 빼고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에서 OTT를 삭제합니다.

아니,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추가된 유료 방송 관련 미디어 환경 변화에, 지금 그건 사양길인데 거기에 적응하겠다는 건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지난해에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해서 보고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만 지난해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 추진 방향'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통합미디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 방통위 어느 국장한테 그때 이런 걸 보내지 않고 이런 취지로 하겠다고—상임위인가요—이야기하니까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냥 눈치만 보는 거지요.

사실 통합미디어법이요,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이런 통합미디어법 살펴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둘 다 대선공약이었어요, 양당의. 아니, 그러면 숙의해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양당이 다 대선공약인데, 실감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미디어 거버넌스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그 핵심인 OTT는 빼고 그동안 방통위원회 기관이 준비해 온 정책목표도 뒤집고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또 가볍게 무시하는 그런 모순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60번 넘어갈게요.

이게 왜 이진숙 축출법인가.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이진숙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두 분이 약간……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뉴스를 심도 깊게 읽어 볼,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교육부장관후보자에 올랐다가 낙마한 그 이진숙과 저기 앉아 계시는 이진숙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전혀 다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셨나?

(「기소됐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유시춘 위원장은 왜 안 나가고 그렇게 감싸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기소 안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기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이게 보면요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비교하면 소위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그러니까 기존 14개 소관 사무에서 4개만 추가됐어요. 18개 사무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를 추가하면 그냥 법만 상식적인……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법만 개정하면 될 건데 도대체 이 법을 아예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하고 싶다면 법을 바꾸는 김에 국민들이 봐도 '미디어 환경 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여기에 적절하게 바꾸네'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올 만한 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겨우 한 4개 소관 사무를 추가해 가지고, 추가하기 위해서 있던 법을 폐지하고 부칙

에는 이진숙 나가야 된다라는 걸 명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법이라고 내용, 일종의 라벨 갈이지요. 라벨만 여기서 떼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정책 체계의 일원화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결격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정당원이라든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임명 전 3년 이내, 그러니까 종사했던 이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리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 신분을 상실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결격사유 규정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규정이 이해충돌 방지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이렇게 확대되었다면 당연히 결격사유도 확대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산업 범위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확대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새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법은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을 소관 사무로 추가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법이라고…… 이게 참 말이 안 나오지요.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졸속이냐 하면 이런 결격사유 규정에는 이 관련된, 추가된 소관 사무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말이지요 민주당의 어떤 분은 사실상의 교주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데.

김어준이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되어서 자신과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유튜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어준, 이게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들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방심위 직원의 73%인가요?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KBS하고 MBC 이런 다수 구성원이 언론노조 소속임을 고려하면 언론노조원이 기획하고 언론노조원이 제작해 가지고 언론노조원이 방송한 표현물을 언론노조원이 심의해서 언론노조원이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할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이해충돌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이런 핑계,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미뤄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몫 추천은 미루면서 그동안 지난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사실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계속 이의 제기하고 소송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이면 그냥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결과로 현재 이 방통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그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전혀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해서 업무를 수행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몫 한 자리도 비어 있지요.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후보자를 추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있을 때 임명하게 되면 구도 자체가 소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불리하게 된다, 아마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서 법을 바꿔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 자체를 지금 퇴진시키려는 그런 것인데, 사실 이것 꼼수 아닙니까?

이게 사실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 탄핵, 이틀 만에 탄핵시켰지요, 국회 민주당에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재판관조차도 왜 국회는 국회 몫 추천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갖 꼼수로 계산해 가지고 추천을 미루어 가지고 소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유리한 구도로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게끔 해서 완벽히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오늘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소위 2인 체제 막 욕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조항은커녕 오히려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해야 한다 이런 의사정족수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5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할 때 이게 4인 이상이면 다수당이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것 합의제인데 합의제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이 위원회를 휘두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얼마 전에 관례를 깨고 저희 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두 차례나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만 추천하고 국민의힘, 저희 당 추천 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켜서 민주당의 뜻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일당 독재지요.

아니,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을 저희 당 간사로 선출하는 것을 민주당이 부결을 시켰더구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사실 일종의 양당을 대표하는 협의 창구를 뽑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형국은 보면 2반 반장을 뽑는데 1반에서 '야, 그 사람 반장 하지 마. 안 돼' 이런 것하고 똑같거든요. 국회의 오래된 관례와 상식 이런 것을 깨고 이것 마구 휘두르는 겁니다. 이게 다수결의 폭주고 이게 독재로 가는 하나의 길이겠지요.

아까 말씀한 게 나왔네요. 자, 61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위원 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위 등에서 위원 수가 왜 7명이 되어야 하는지, 저 말고도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종면 의원이 말씀한 대로 '정답은 없다' 그랬습니다, 답변이.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라는 게 왜 7명인지, 그러면 왜 9명은 안 되는지 왜 5명은 안 되는지, 그냥 이것 다수당의…… 우리가 9명, 5명 해서 중간의 7명 정했으면 그냥 따라와 이것 아니겠어요? 이게 숙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나눠 먹기 식 졸속 입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한 규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위원 7명 가운데 상임위원을 3인 그리고 비상임위원을 4

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원이 다 하지요. 상임위원이 안건의 발굴, 상정, 처리, 집행 업무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임위원들은 뭐 표결만 한다고 봐야지요. 상임위원들이 실무와 집행을 독점하면 논의할 때 일단 매일 출근해서 그 사안을 들여다보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합의제라고 하는데 사실상 합의제가 아니지요. 독임제 기관하고 다를 바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을 늘리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2인 체제가 합의제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독임제 기관의 검토를 건의했다 그러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실상 독임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셈이지요. 그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 불러온 방송 장악 아닙니까?

민주당은 최근에 여러 법안을 통해서 혹은 대표의 여러 발언을 통해서, 지도부의 발언을 통해서 민주주의 핵심 원리가 삼권분립인데 이 삼권분립을 가볍게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진숙 위원장 축출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해서 졸속 입법을 하다 보니까 삼권분립 원칙 위반을 비롯해서 온갖 위헌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62.

먼저 이진숙 위원장 축출 규정 자체가 위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소관 사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기능도. 사실상 동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새 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부칙 4조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위원회 공무원으로 승계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은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이것을 부칙에다가 떡하니 넣어 놨어요.

그동안에 사실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안건도 심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통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 보장을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출되거나 조직이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기존 위원의 승계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의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제7조와 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다, 그래서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입법권에 의한 간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의 부칙으로서 임기가 남은 위원의 지위를 박탈하게 된다면 이것은 저희 입법부가 스스로 법률로 보장한 임기와 신분 보장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위헌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로 공무원을 임면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법으로 해서, 그렇게 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서 교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로 공무원을 임면한다면 이건 삼권분립 위반이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 인사입니다. 이 법을 입법하고 통과시켜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하는 것은 국회에서 임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장관을 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삼권분립을 명백히 위반한 위헌적 법률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무직 공무원은 이진숙 위원장 한 명뿐입니다. 부칙 조항의 타깃은 오로지 이진숙입니다. 이런 오직 단 한 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은 법학에서는 매우 좁은 의미의 처분적 법률로 분류합니다. 처분적 법률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처분적 법률이 삼권분립 위반, 평등권 침해, 법적 안정성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차별취급이 합리적이거나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축출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허용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만난 헌법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직접 행사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의 억지 탄핵이지요, 이틀 만에 탄핵한 것. 사흘씩이나 혹독하게 청문회를 했었으면 근무할 시간을 한 사흘 주고 난 뒤에 탄핵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이틀 만에 탄핵을 했어요. 이런 탄핵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축출을 인정할 만한 차별 취급의 합리성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반대토론을 한 저희 당 의원도 지적했지만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조직 교체의 혼란기 속에서 이런 업무 수행 조직을 수장 없이 방치한다는 그런 점에서도 차별 취급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떤 공익적 요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진숙 위원장 축출 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인 규정입니다.

63번, 왜 이진숙 축출법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위원 7명 가운데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방위에서 공청회를 열었을 때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가, 헌법학자지요, 국회가 추천권을 직접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과 국회가 인사권을 나누어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행정권과 중앙행정기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인호 교수가 국회는 대통령 인사권 승인의 형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보탤 수 있으나 특정인을 추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정당의 위원 추천 이런 게 정파적 갈

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타당한 주장이고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인가 소위에서인가 또 한 번 소개한 것 같은데 2009년 9월 24일 날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인데 제주도의회의 조례 가운데 '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중 일부를 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규정한 게 있대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인데 대법원은 동의나 승인 같은 소극적 혹은 사후적 개입은 가능하나 임명 강제 등 적극적·사전적 개입은 위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가 미리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절차 없이 도지사가 추후에 확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면 이런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지마는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는 규정은 지방의회가 지사의 인사권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를 도지사가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 규정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 판결의 법리와 결론은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단체장의 관계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안은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헌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독립된 권한인 인사권은 국회의 추천에 종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열린 공청회와 또 다른 일부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비롯해서 여러 법률 조항과 헌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헌법 원리상 추천 강제 조항이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회의 동의권은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사후적·소극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추천하는 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소위 임명 혹은 위촉하도록 하는 적극적 개입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그동안 국회가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국회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민주당의 삼권분립은 가볍게 무시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임명 강제조항은 민주당의 삼권분립 무시, 소위 일당독재 성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으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4번.

방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지금 새 법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사후 검열이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독임제 행정기관에 부속해서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자문기관, 심의기관의 형태로 설치합니다. 이런 합의제기구로서 위원회는, 그런 위원회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이미 합의제기구인 위원회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것의 적합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제에서는, 그런 체제에서 위원회·위원회 구조가 탄생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에 의한 검열 또는 표

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침해 방지 이런 것과 사실 깊은 연관이 있는 거지요. 그걸 좀 피해 가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지만 행정부에 속해서 제재조치를 비롯해서 강제성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만약에 직접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면 검열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사실 굉장히 고민 끝에 민간기구로 소위 또 다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연혁, 구조를 고려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설립 의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성이 다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새 법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새 법에서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아마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보다 새 법에서는 공무원성을 더 강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이미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보는 결정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기관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당연히 국가기관이, 소위 공무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뒷배경에는 국가의 검열이라든지 언론자유 침해 이런 거를 어떻게 비난을 피해 볼까 그리고 혹은 그런 논란을 피해 볼까 해서 민간기구로 만들어서 고심 끝에 만든 건데 그런 거를 사실 몰라서 그런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으로 보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지요, 설립 취지나 이런 거에 볼 때.

그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기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사실 이런 것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검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학자분은 진보진영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사후검열은 검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사실 사후검열은 검열이 아닌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지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게 어떤 언론자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삭제하고 이러면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행정권이 주체가 된 검열을 사실은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물 제출의무, 행정권 주체가 된 사전심사,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그리고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를 그런 검열의 요건으로 우리 헌법은 삼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후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현행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심의위원회의 행정기관성을 강화한다면 행정권이 주체가 된 표현물의 심사라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특성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까지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행해진다면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심의위원회의 행정기관성을 강화한다면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요. 이런 거를 사실 숙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TF를 만들거나 해서 좀 더 전문가들, 학자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법이 통과된다면 심의위원회가 정권에 종속될 가능성 또한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우려됩니다.

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올까요?

○부의장 이학영 예, 다녀오십시오.

○김장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하려고 하느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그러면, 제가 쭉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고 뭐 위원이 5명이다, 9명이다 하다가 7명으로 되고 7명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소위 졸속성, 졸속 입법을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에 집착하나? 이거 사실 순서가, 앞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집착하냐?

PPT 1번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졸속성,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왜 집착하냐, 민주당은? 이런 여러 논란에도 집착하냐? 이거 아마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 번째, 유튜브·좌파 인터넷 매체의 의혹 제기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친민주당 시민단체 성명, 대대적인 보도로 어젠다 세팅—이게 세 번째 공영방송의 역할이지요—그리고 네 번째, 진실 공방 통한 의혹 확대 재생산과 지지층 결집, 그리고 사후에 진실이 밝혀져도 파급력 미미 '아님 말고' 이런 5개의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정치공작에 몰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2025년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까지 이게 20년 이상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 대대적인 보도로 어젠다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반드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법은 민간 방송까지 언론노조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게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이런 무리수를 둬 가면서 이진숙 위원장을 굳이 소위 처분적 법률로 축출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정치공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의혹 확산 메커니즘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유튜브 좌파 인터넷 매체의 의혹 제기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타파, 열린공감TV, 매불쇼, 일요시사 등의 유튜버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의혹을 최초로 던집니다. 이게 사실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에 주로 등장하는 게, 단골 메뉴가 검증되지 않은 녹취록입니다. 음성조작이 됐거나 혹은 편집·짜깁기 됐거나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데 일단 사실 여부보다는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과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나섭니다. 소위 공식

화 작업을 하는 거지요. 유튜버들이 던진 의혹을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나 이런 데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정식 정치 의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친민주당 시민단체도 성명을 발표해요. 이렇게 하면서 의혹을 공식화하는 작업에 한몫 거듭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입니다. 그리고 한마디합니다,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의 권리다'. 맞지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의혹이든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님 말고, 제보받았는데,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제보도 합리적인 근거가…… 제보를 전부 기사로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보가 들어오면 취재를 해 가지고 이게……

(「대장동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뭐라고요?

(「대장동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잘 안 들리는데 그냥 듣고 계시지요.

(「그냥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압니다. 나는 제가 새겨들어야 할 말인가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계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확성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점에 좀 나가서. 그래서 그동안 보면 MBC를 비롯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반복 보도합니다. 나중에 반복 보도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기정사실처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나서면, 장악한 공영방송이 나서면 이 단계에서 의혹이라는 게 단순한 추측 같은데 이게 사회적 이슈로 격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지요.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편향적 보도 행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 이슈 확산이지요. 이렇게 되면 의혹 제기하고 반박이 이루어지고 재반박의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의혹이 더 확산되는 거지요. 이때부터 사실 여부하고 관련 없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되면 각인 효과가 됩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고 무슨 공영방송이 그것을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것 뭔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설마 MBC, KBS가 무슨 가짜뉴스 보도하겠냐, 이것 여야 공방하면 뭔가 있으니까 여야가 공방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을 시청자에게 심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층은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아님 말고' 이런 전략입니다.

이제 수사가 들어갑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겠지요. 그러면 한참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한참 뒤에 판결이 나오고 결론이 나면 이미 정치적 목적은 다 달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외부인사하고 오찬을 한 걸까 하는 의심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그동안 선거법 재판 얼마나 질질 끌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완전히 시청자들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6·3·3 원칙을 깨 가면서 1심에서 2년 가까이 질질 끌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저쪽으로 가서 생각이 안 나고 '아니, 조

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빨리 재판을 진행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님 말고' 전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사해 가지고 그 오찬은 없었대,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이래 이렇게 밝혀져도 사실 그 정치적 목적은 이미 달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또 한마디합니다. '진실 규명이 됐으면 됐지, 뭐. 우리가 의혹 제기할 만한 것 아니야? 제보가 들어오는데 어떡해, 제보가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지'.

이런 전략인데, 이런 게 중간에 핵심이 공영방송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을 빨리 쫓아내서 방미통위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빨리 KBS 사장도 바꾸고 또 연합뉴스TV·YTN 사장도 바꾸고 또 그렇게 해서 보도책임자를 임명동의자로 활용해서 언론노조의 품에 안겨 주고 이렇게 해서 소위 정치공작을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여기서 공영방송이 어젠다 세팅을 해 주지 않으면 유튜브나 제보자의 의혹 제기는 그저 루머에 그칠 뿐인데, 사실 보면 광우병 사건에서도 이것 볼 수 있지요. 이미 이명박 정권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랬는데 나중에 뻥이야, 그 효과는 다 봤지요. 이것이 바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데 또 쉽게 약효가 먹혀요. 그래서 사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PT 2번 보십시오, 김대업 병풍 사건.

이 첫 번째가 가짜뉴스의 원조지요. 대한민국 선거사를 뒤바꾼 김대업 병풍 사건인데, 이 김대업 병풍 사건은 2002년도 16대 대선에서 일어난 건데 이래서 아마 극적으로 승부가 뒤바뀐 정치공작 사건입니다.

이게 현재까지도 민주당하고 진보 좌파 진영의 의혹 확산 전략의 원형으로 남아 있는 것,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선거의 결과를 바꿀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 왔습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1위로 달렸는데 이 사건으로 지지율이 11.18%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무현 후보에게 근소하게 패배했는데, 이 의혹은 2002년 5월에 오마이뉴스, 소위 친민주당 매체라고 볼 수 있지요.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의 제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MBC에 있었는데 MBC도 거의 매일 뉴스에 이걸 가지고 도배를 하다시피 했지요.

김대업은 1997년에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작된 녹음테이프를 제기합니다. 나중에 수사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때는 이미 대선이 끝난 뒤지요. 이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엄청난 타격을 입어 가지고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소위 공영방송의 역할입니다. 왜 이진숙을 그렇게 축출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것 나중에 다 뻥이야라고 밝혀졌는데 MBC하고 KBS 이런 공영방송이 연일 방송합니다. KBS만 해도 80여 차례나 집중 보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이 의혹이 의혹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로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업의 행보를 보면 당시에 이 사람이 수사관이 아닌데 수사관 신분을 사칭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김대업의 주장

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뤘습니다. 결국 김대업이 2004년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고, 공무원자격 사칭을 비롯해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결국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대법원이 한나라당 손해배상 청구에서 김대업은 5000만 원, 오마이뉴스 3000만 원, 일요시사 2000만 원, 총 1억 원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1억 원 이것 뭐, 이미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선거 결과는 바뀐 후였는데 1억 원이 대수겠습니까? 소위 목적하는 바는 다 성취를 한 거지요.

3번, 오세훈 내곡동 생태탕 한번 볼까요.

이것 지금도 끓고 있지요. 아직도 끓고 있는 오세훈 생태탕 의혹인데 이것도 선거 때 등장한 겁니다. 2021년 4월이지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게 제기가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행태를 보면 김대업 병풍 사건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거는 TBS 뉴스공장, 그 당시에 김어준이 진행을 하고 있었지요. 소위 괴담 장사꾼, 민주당의 교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 김어준이 오세훈 후보의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을 경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소위 김 아무개 씨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김 아무개 씨는 2005년, 그러니까 한 16년 전이지요. 16년 전에 국회의원이던 오세훈 후보가 장인과 함께 측량 현장을 방문했고 이후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어떻게 보면 더 믿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태탕집 사장 황 씨 그리고 그 아들이 직접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이들은 오세훈 후보가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흰 바지를 입었다, 16년이 지났는데 생생히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MBC는 생태탕 의혹을 또 집중 보도하지요.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시사라는 매체가 3월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 게 뒤에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4월 2일 뉴스공장에 출연하기 전이지요. 그런데 그 생태탕집 사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음성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그 아들도 오세훈인지 몰랐다 이렇게 증언을 번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관련자 20여 명을 조사하고 오세훈 시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확인했는데 불기소처분을 내렸지요.

그런데 이거요, 이거 또 뭐 국민들이 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게 타이밍입니다. 선거 직전 단시일 내에서 진실규명이 어려운 그런 의혹을 선거 직전에 퍼뜨린 거지요. 그리고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중간에 소위 공영방송이 어젠다 세팅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효과를 주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노린 거지요. 이런 게요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하면서 계엄령 내릴 때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등등 저희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자치단체장이 있는 그 단체장들이 어떤 계엄령 사태에 동조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그건 사실과 다른 데도 있고 그리고 다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에서도 한 적도 있고 그거는 사실 전혀 제기되는 혐의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흠집을 내는 거지요. 그런 정치공작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공영방송이 있어 왔습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도 한번 보시지요.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 대선판을 뒤흔들었지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인데, 2022년 대선 막바지에 이 녹취록이 나오지요. 이것도 진짜 타이밍, 앞서서 말한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게 대선 사흘 전에 절묘한 타이밍에 공개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보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작된 정보를 통한 선거개입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뉴스타파가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그러니까 이게 2022년 3월 6일 날 했는데 2021년 9월 통화 녹음했던 거를 공개를 한 거지요. 윤 후보가 대검 중수과장 시절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 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 뉴스타파의 보도는 짜깁기를 선택합니다. 선택적 편집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했지. 그냥 봐줬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편집된 버전을 보면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 녹취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김만배가 한 번에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냥 봐줬지'의 주어가 박 모 주임검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의혹 역시 '조우형에게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 주더래'라며 마치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의 커피를 타 주며 사건을 무마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김만배: 혼자. 거기서 타 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라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축출에 골몰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공영방송 MBC가 등장합니다. 이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자 대선 이틀 전에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4개의 리포트를 제작하고요 일곱 번의 녹취록을 방송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툴을 거치면서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방송사의 선거방송준칙을 보면 선거에 임박해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는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우리 편에 유리한 것은 있으나 마나다, 그냥 무시하는 거지요.

이 사건이 1시간 12분가량의 통화를 특정 부분만 떼어 내 가지고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뉴스타파는 이것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언론이 가진 편집권이 어떻게 정보조작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용되느냐라는 것도 잘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대선판에 영향을 미쳤지요. 이것이야말로 '아니면 말고'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까 초반에 소개했듯이 다섯 번째 '아니면 말고'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위헌적이고 졸속적인 법을 마련해서 계속 소위 이진숙 위원장 축출을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나라는 게 공영방송을 위한 정치공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의심을 살 만한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5번.

또 하나의 사례인데, 잘 알다시피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지요. 이게 민주당식 의혹 제기 패턴을 가장 명확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가 어떻게 국

회라는 공적인 장소를 통해서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소위 자칭 시민언론이라고 하는 더탐사라는 매체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제보를 받아도, 김의겸 전 의원도 기자 출신인데, 언론계 제 후배지요. 그런데 제보를 받으면 사실 확인 작업을 어느 정도 해야지요. 그런데 마구 던진 거예요. 여기서도 녹취록이 등장합니다. 김대업 사건 뭐 이런 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녹취록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소위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녹취록을 틀면서 의혹을 공론화시킵니다. 국정감사라는 무대를 이용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했는데 지금 이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상은 아무 입증할 진술도 증거도 없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였습니다.

법원이—지난달이지요—김의겸 의원에게 7000만 원 배상해라, 제보자는 1000만 원을 배상해서 한 전 장관에게 줘라 이렇게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게 민주당이 국회의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전략입니다.

그런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거 아직도 사실인 양 믿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의겸 전 의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권 바뀌자 아마 이런 걸로 공을 세웠다고 판단했는지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된 거 아닙니까? 가짜뉴스를 그냥 생짜로 유포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으로 임명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거에 개인적으로 당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필리버스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의 당시 조 모 의원이 대법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당시에 보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법원의 양형위원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조 모 의원이 MBC 보도본부장인 김장겸 본부장이 대법원에 양형위원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MBC에서 성추행으로 징계를 몇 달 받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법원 행정처장이 모르니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버버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면책특권이라고…… 그러니까 언론사 보도본부장에 대한 게 사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 잘 걸렸다. 나 면책특권 자리에서 그냥 지르고 말지' 그래서 그냥 제 실명을 거론하니까 쫙 그냥 성추행 전력자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징계받은…… 제가 그때 중국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에서도 아니, 이런 사실이 없는데 민주당의 조 모 의원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떠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회사 후배 중에 그렇게 해서 두 달 정직을 받은 기자가 있었어요. 그 기자가 저하고 같은 거는 성이 김 씨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면책특권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질러 가지고 아니면 말고…… 제가 그거 민형사 고발을 했는데 형사는 면책특권으로 무혐의 처리하더라고요, 검찰에서. 검찰 출신 의원이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었는지…… 그런데 그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런 사실이 있길래 제가 그걸 민사로 다시 걸었는데 민사로 거니까 제가 몇백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언론에 쫙 뜨는 거예요. 이게 노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공작……

그런데 그 의원이 과연 사실 확인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드러날지 몰랐을까요? 저

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의원이 검찰 출신인데 아마도 이건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내가 이 사람을 좀, 무조건 속된 말로 조지겠다 이렇게 한 거 외에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공작을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 축출을 하기 위한 위인폐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6번이요.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했는데 이것 역시 패턴이 안 바뀐 거예요. 이것 역시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현재진행형이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제기하면서 익명의 제보자……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증 불가능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정상명·김충식·한덕수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고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믿을 만한 제보다' 이렇게 아주 모순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이 음성 자료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AI 음성이다' 이렇게 하니까 서영교 의원은 '유튜버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다음, 한번 제목을 볼까요? 제가 받은 걸로는 이게 보면요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조 모 의원처럼 '아니면 말고', 면책특권, 공작적인 폭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앞선 사례들하고 너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법을 통과시켜서 방송 장악을 완결하려고 하는 것은 유튜브 좌파 매체의 의혹 제기, 민주당의 공식화,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확성기, 여론전을 통한 의혹 확대 이런 공식이 여전히 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번.

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 앞의 사례에서도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반복된 정치공작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공영방송은 의혹을 기정사실화, 어젠다 세팅을 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킬 방미통위법의 핵심은 이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방송사 이사회 구조. 그러면 KBS·MBC·EBS 이사 수를 지금 9~11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5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학회·현업단체로 확산시키는 건데.

내걸고 있는 포장은 아주 좋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 실상은요 친민주당 성향 단체들을 통한 간접 장악 전략입니다. 소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규제기관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인사들이 핵심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른바 라벨갈이, 이름만 바꾸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결국

앞에서 봤듯이 소위 공영방송 혹은 지금 민간방송까지 영향력을, 언론노조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친민주당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결국은 소위 여론몰이 혹은 정치공작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하루빨리 해야 된다 이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 위헌적 악법이라고 이것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냥 민주당에 반대해서, 단순히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설명한 대로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결국 정치공작 이런 것을 시스템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구히 고착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까지 20년 이상 반복된 의혹 확산 패턴을 영구적으로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짜 목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고 공영방송 장악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지난번 법안 통과시킬 때 얼마나 졸속적으로 했느냐 하는 그것으로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과방위 소위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여하지 못한 지난번 소위에서 최민희 의원안 9명, 김현 의원안 5명 이렇게 했다가 7명으로 합의 봤는데 제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근거도 없이 방통위원 졸속 증원해 가지고, 늘려 가지고 정치적 나눠 먹기밖에 안 된다, 왜 7인이어야 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저는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방통위 처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7인으로 지금 5인에서 늘었는데?'. 그러니까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가 '위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은 사실은 입법목적상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피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과 규제를 통합해 가지고, '이 법의 목적이 진흥과 규제를 통합해 가지고 뭔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것 방통위가 찬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재차 제가 물어봅니다. 그랬는데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가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얼버무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위원 수가 7명으로 늘면 업무 진행에 있어 가지고 지금 5인보다 훨씬 지체가 되고 하는 일이 아주 많을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또 방문진 사무처장은 '그 부분은 결국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다'고 피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아니,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 방통위가 제출한 그 안을 보면 통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율성 그리고 이런 게 떨어지게끔 지금 해 놨는데, 그러면서 진흥과 규제는 합쳐 놓고 이러면 방통위의 기본 입장하고 달라진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본래 방통위가 원하던 그런 취지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가 물어본 것 아니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만 돌아온 답이 '기본적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방송의 진흥과 규제 업무가 통합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 지금 말씀하셨는데 미디어 환경 변화 좋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됐다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가 소관 사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을 계속합니다. '뒤에 11조에서 보겠지만 지금 김현 소위 위원장께서는 이것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했는데 민주당안 오늘 제출한 것만 봐도 방통위 기존 14개 소관 사무에 네 가지 정도밖에 추가 안 됐고 심의 대상 29개에서 32개로 단 3개 늘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획기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지.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 추진 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통합 미디어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소관 사무조차 그리고 운영원칙 이런 데 대해서 이게 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건데 다른 것을 지금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인 거냐? 한번 답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사무처장직무대리가 '방통위 사무처로서는 정부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그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싹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사무처로서는 지금 현재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거냐' 하니까 그 전해에 저희 의원실에서 보고했던 것하고는 달리 '예, 지금은 낼 수 없다', '방통위의 의견은 지금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방통위 사무처장의 입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내용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한테도, 7명이 왜 7명인지 이것 노종면 위원님이 한번 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민 위원이—조국혁신당이지요—'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고민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7명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민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목적을 생각해 봤는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근간에는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획기적인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위원 수 확대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답을 주실 것 같고 저도 듣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7명으로 정했는지 이해민 위원조차도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최민희 의원안이 위원 수가 9명이고 김현 의원안이 5명인데 소위를 하다가 충분한 이유 설명 없이 그러면 9명·5명이니까 7명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민 위원조차도 '답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저는 방송 3법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 선출직인 국회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노종면 위원—아까 계시다가 안 계시는데—김현 소위원장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숫자가 왜 7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대하시는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요. 그러나 최소한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자면 그냥 9하고 5의 중간에서 7로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소위 그 분야를 대표할 만한 그동안 그런 게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소위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노종면 위원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위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 위원회의 업무 종류, 성격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IPTV 등 유료방송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IPTV라는 유료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의 발전 그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방송 형태의 출현과 또 혁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감독해야만 가능한 분야여서 방통위의 업무가 질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질적·양적으로 업무가 확장되는 데 증가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노종면 위원 발언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 안대로 9명까지 늘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7명이 맞는지, 더 늘려서 11명이 맞는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늘리되 정무직 숫자를 조정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선택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임위원 5명에 비상임위원 둘을 늘리거나 상임위원 둘을 더 추가하는 방식은……’.

‘저는 일단 상임위원을 추가로 더 늘리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무직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큰 원칙에서 볼 때 가급적이면 피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직을 담당하는 위원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이게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에서 볼 때 숫자는 늘려서 늘어난 업무에 대응해야 하는데 정무직을 오히려 좀 줄이고 전체 총원은 늘리는 그러한 설계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판단인데 이런 판단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 위원님 말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서 이게 왜 정답이냐고 하면 그때는 할 말은 없어요. 9명도 충분히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을 셋으로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넷으로 두는 방안이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해서 제안했던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거 뭐 7명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좀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소위 과정에서 9명에서 또 한쪽은 5명, 거대 여당의 의원 두 분이 그렇게 안을 내니까 그러면 절충해서 7명, 이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현 소위원장이 ‘제가 좀 더 부연을 하면 5명이 3 대 4, 상임이 3이고 비상임이 4고요. 뒤에 가서 논의하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상임 하나가 되고,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화 되고 2인이 상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6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되는 설명에서 ‘그래서 전체로 사실은 장관급 위원장이 지금 둘에다가 차관급 상

임위원이 6명이었던 거지요. 6명이었던 것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면서 사실은 차관급 상임이 하나 줄고 비상임 둘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설명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방통위원회만 보면 상임·비상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는데 방통위가 상임으로 5명 하고 또 상임을 1명 늘리는 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소속 기구는 방통위가 유일합니다. 권익위나 인권위나 다 국무총리 산하로 돼 있고, 소위 상근하는 차관급·장관급이 제일 많은 데가 방통위예요. 지금도 5명인데 저희가 4명으로 하고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통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방심위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포지션이 좀 옮겨 오면서 늘리는 것을 조정하면서 상임과 비상임 숫자를 조정했다는 거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무원 숫자는 안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냐' 하니까 김현 소위원장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지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늘어났다 이런 말씀인가요?' 했더니만 '전체 규모에서 하나가 늘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제정안—소위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이 법도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상임 3, 비상임 4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하고 비상임하고의, 비상임은 표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격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심의 의결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상임하고 비상임은…… 아니, 상임위원은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심의 의결에만 참여하는 비상임하고는 아는 정보나 업무 관여도가 너무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합의제 기구가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합의제 기구의 그 취지에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을 하고, 제가 그렇게 다시 지적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하고 하는 일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텐데 이게 합의제 기구로서의 입법취지에 맞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김현 소위원장이 '방송위원회도 9명이 상임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절로 되돌아가느냐, 방송위원회 예까지' 이것을 반문을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상임의 역할을 조정하는 거고 심의 의결 권한을 상임이 하는 것과 비상임이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건 세부적으로 방통위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해 주면'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이훈기 민주당 위원이 '지금 상임이 3명이고 비상임이 4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임만 5명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방송위원회를 보면 그때 상임 5명, 비상임이 4명이었는데 상임과 비상임의 업무 능력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집중할 수도 없고', 그게 업무 능력이라기보다는 업무 관할 수행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훈기 위원께서는 '저는 총 7명으로 하면 그냥 상임을 5명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비상임 2명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비상임위원 하는 분들이 자기 업무가 있고 가끔 와서 하는데 그 사안 사안, 의결사항에 집중하거나 전문성을 갖기에 제가 보기에 상임하

고 많이 다르다고 본다, 과거의 방송위 사례를 봐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훈기 위원은 '차관급의 상임을 늘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5명이었으니까 5명으로 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비상임을 2명으로 하는 게—9명까지 늘리기는 힘드니까—그런 생각도 사실 좀 더 들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지적이 나오면, 이게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통과시켜 가지고 꼭 이진숙 위원장을 하루빨리 축출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급한 마음은 알지만 민주당에서조차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정말 숙의를 하고 법을 좀 더 꼼꼼히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현 소위원장이 이런 이훈기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통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5명·2명 했을 때 방통위 구조도 감안하고, 방통위의 현행 인원, 지금 35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300명 규모다. 방통위가 여기서 상임 다섯에 비상임 2명으로 갈 경우에 방통위 업무가 매우 가중된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최형두 위원이 '이 문제는 단순히 상임·비상임 위원 숫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진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도 있지만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보면 두 유형이다. 하나는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통합형 이것이 미국하고 일본—이 두 나라는 이런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기능분리형, 정책과 진흥과 규제를 하는 분리형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진흥과 규제를 통합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이것은 2008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2013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태동할 때, 이것은 계속 논란이 됐던 거고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특위를 해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이 제정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최형두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식이냐 하면 사실은 기능통합형인데 독임 부처 두 군데가 이것을 일부씩 뜯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을 한 번에 가져오려 했더니 또 약간 반발이 있어서 미뤄 놓고 어정쩡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아마 일부 제출된 법안 중에 보면 이것을 독임으로 하고 차라리 유럽식으로 정책 진흥은 독임으로 하고, 규제는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 위원이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부처 간에 분산된 사무를 통합하는 것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인데 독임제 부처가 미디어 산업 영역 대부분을 통합 관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예컨대 지금 과기정통부 또 문체부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걸 미디어라는 것으로 한꺼번에 묶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논의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미디어 관련 사무를 통합하되 위원회 조직의 사무를 확대하여 진흥과 규제 업무를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정쩡하게 봉합된 형태로 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독임제 부처의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을 테고. 또 효율성만큼 위원회 조직이 다

수 위원의 전문성과 협의를 통한 신중한 심의와 의결도 또 중요한데 이것은 속도 문제도 생길 테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독임제 부처가 공공미디어를 제외한 미디어 거버넌스를 전담하는 안은 시의적·효율적 정책 집행과 미래지향적 대응이 가능하고…… 저는 이게 케데헌 사태에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최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형두 위원은 '위원회 조직을 확대해서 방송통신 사무를 담당하는 안은 미디어산업에 특화된 정책 수립과 독립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김현 위원이 확인을 하자고 하니까 최형두 위원이 공개된 자료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숫자와 함께 이런 큰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번에 법제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최형두 위원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 숫자 문제다.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전체가 5인이냐 7인이냐, 그런데 5인으로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최형두 위원 이야기입니다. '미국 FCC도 적당한 5인 합의제라는 것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펜타곤이지요. 이렇게 5개의, 세 발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지혜를 모으기 좋고 신속성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5인이든 7인이든 문제는 남는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공전했던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최형두 위원은 '오히려 이인호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국회가 의결을 했으면 몇 개월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무슨 강제조항을 두는 법안, 지난번 우리가 5인 체제가 2인 체제로 되었던 문제가 그런 건데 정부가 당시에 뚜렷한 이유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7개월을 연장시킨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든지 그것도 아닌 채 그냥 7개월 뭉개서 한 게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지금 체제도 그렇고 또 개편된 7인 체제도 그렇고 국회가 4명을 선출하게 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위원회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당이, 다수당이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은 채 사실상 당론으로 만들어서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부결시켜 버리면 사실은 이게 앞으로 4인 체제로 갑니다, 뭐 5인 체제나.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최 위원이 지적을 하자 김현 위원이 알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김현 위원이 좀 덧붙이겠다고 그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9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고 그래요. '상임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것도 있지만 9개가 있는데 2개가 지금 외부 인사로 운영을 하고 있다, 7개가 상임위원들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근거를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위원이 '예를 들어 통신분쟁조정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인데 이 부분이 비상임위원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이 현재는 부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 전문적인 비상임위원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을 맡게 되면 훨씬 더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역할, 예를 들어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나 아니면 방송평가위원장의 경우도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방송평가위원장을 내부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임위원이 방송평가위원장을 맡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방송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속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그래서 세세한 것, 상임위원의 논의와 비상임위원의 논의가 차별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심의 의결의 안건과 그리고 상임위원 숫자가 어쨌든 보면 정치권의 배려 몫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회 추천 몫을 3인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하다라는 지적도 많기도 해서 비상임위원을 늘리고 상임위원을 조정을 하면서 정치적 후견주의도 약화시키고 국민 참여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몫 하나도 줄여서 대통령 권한도 내려놓고, 방통위가 그렇게 된다는 점으로 7인 구조로 얘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후견주의 약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게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고 그러면서 방송 3법에는 국회가 직접 추천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사들 할 때. 국회가요 KBS 6명이지요, MBC 5명이지요, 직접 추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 약화 운운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아니, 제가 MBC에 수습기자로 들어가서 30년 정도, 사장까지 했는데 진보 좌파 진영에서 줄곧 주장한 게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였습니다. 지금 김현 위원도 정치적 후견주의 약화시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방송 3법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국회에서 직접 추천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전문위원 하신 분도 이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정헌 위원이—민주당 위원입니다—'저는 7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인을 추천하는 부분까지도 동의합니다. 저는 앞서 이해민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한번 논의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이해민 위원은 조국혁신당 소속입니다—그래서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한다라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이해민 위원이 제안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다.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이어 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노종면 위원이—민주당 위원입니다—'아까 위원장 말씀 중에 기존의 상임위원 5명 체제가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상임위원을 줄이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라는 건데, 이어 갑니다.

‘정부 기구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얘기하는 것에, 저는 맥락이 이해는 됩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선출된 권력이 책임을 지고 구성을 하는데 합의제 기구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추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임명되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장관들은 다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안에 한 가지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교섭단체가 둘임을 상정하는 거잖아요, 이 방안은. 교섭단체가 셋 이상일 때 가능합니까, 이 규정 적용해서 정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현 소위원장이 ‘가능하다.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하나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노 위원이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 1 포함해서 3인을 추천하는데 그 외 교섭단체가 복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정헌 위원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여러 가지 교섭단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국회 다수당이 교섭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거론을 해야지, 이것을 갑자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21대 국회 때도 선거법 개정할 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 기록을 남겨 두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 현실을 감안해서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데 무조건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자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등 정당이 되었는데, 상당한 의석을 얻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법, 선거제도와도 연관이 돼 있다. 사실 교섭단체는 지금 20명이라는 숫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는 보면 소위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1인 1선거구제 방식이 돼 가지고 굉장히 득표율과 많이 괴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해민 위원이 우리 소위고 해서 이해민 위원 얘기를 존중하고 싶은데 지금 비교섭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비교섭단체 중에 숫자가 많은 사람을 무시할 겁니까?’ 이런 의견을 지적해서 논란이 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것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7명 가운데 5명이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이인호 교수가—중앙대 교수님입니다. 헌법학자입니다—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는데 국회가 인사권을 나누어서 가지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찾았다’…… 아까도 내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위 제5조와 관련된 건데, 제주도의회 조례에 관한 건데 제주도 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중 일부를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그때 있었는데 이것은 임명 강제, 이런 적극적·사전적 개입은 위법으로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인호 교수님의 위헌성 지적하고 판례가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임명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인사권을 빼앗는 것이다. 위법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것을 국회와 대통령 관계에 아마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임명하라는 규정은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다, 그런 판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논란이 많은 법안이냐면 소위 심의 과정의 속기록을 보면 수석전문위원이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 부분을 설명하면서 '광고 이런 것이 방송통신광고로 되어 있는데 방송광고로 특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김현 소위원장이 '지금 앞에 있던 통신이 빠진 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자고 했던…… 통신을 다 빼자는 얘기네요, 과기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과기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라고 수석전문위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부가통신서비스 조항과 관련해서 여기서 조정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13호로 충분히 포섭이 되고 시정요구도 12호나 20호에서 포섭이 되고 이용자 보호는 15호에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기부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아래의 수정의견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소위원장이 '도대체 과기부의 입장이 언제 온 거냐'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어제 왔다 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랑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수석전문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는 민주당안이 나오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각 부처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걸 졸속으로 빨리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진숙 위원장 빨리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서 공영방송을 통한 정치 선전·선동이 빨리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이것. 이렇게 뭐 언제 왔냐 가지고 한참 논란이 진행됐어요.

제가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격사유 조항에 대해서 아까도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졸속이냐 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법을 아마 그대로 가져온 거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겸직금지 조항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지난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관사무를 새로운 법에 확대를 하자고 한다면 관련 사업 역시 방송미디어통신이 소관사무에 정해진 대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 앞에 설명한 대로 음악유선방송사업, 이런 것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들어가기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광판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것을 추가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된 결격사유 규정은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들어간 게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극단적으로 김어준이 방통위원장, 방송미디어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수 유튜버와 관련된 거 심의할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조합원 간 상호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 입법으로 보인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현 소위원장이 '방송사업자를 다, 어느 방송사업자는 과기정통부에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를 한 묶음으로 묶었는데 누락이 된 거다, 지난번 본인 안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누락이 됐으면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잘 숙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류제명 과기부2차관이 '민주당안 세 번째 네모 보시면 지난번 소위 때 위원장께서 정리해 주신 게 음악유선방송 또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이관 대상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방통위로 이관을 하는 게 오히

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구멍이 뚫리는 거지요.

그래서 류제명 차관이 ‘그 왼쪽에 보시면 소관사무 1호와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유료방송정책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OTT를 제외하기로 하신 취지에 맞게 유료방송정책에 한해서 하고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은 또 문체부랑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는 유료방송’이라고 하니까 김현 위원장이 ‘아니, 이 뉴미디어정책은 IP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준용한 거지요’ 하니까 류 차관이 ‘유료방송에 IPTV, 홈쇼핑 또 중계유선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으로 포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조율이 안 되는 거지요. 정부 부처 간 혹은 업체 간, 업종 간 이런 조율을 하고 숙의 기간을 거쳤으면 이런 게 그 앞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정리를 하지요, 김 위원장이. ‘민주당안으로 하겠다. 또 의견 달라’ 그러니까 류제명 과기부차관이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 번만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 법에 관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 소위원장이 ‘뉴미디어라는 건 언제든지 뉴미디어가 있는 겁니다. OTT가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고요, IPTV 때문에 뉴미디어정책국이 생긴 거고요. OTT 때문에 뉴미디어정책국이 생긴 게 아니고요. 디지털방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문체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방통위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게 교육부·방통위·과기부가 다 관장했던 업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방통위의 원래 했던 업무가, 하던 업무를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정책에 원래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훈기 위원이 ‘그러면 홈쇼핑은 어디서 관할하게 돼요’라고 묻자 류 차관이 ‘홈쇼핑은 방통위로 이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송정책이라고 김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류제명 제2차관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그런데 OTT를 제외하자는 취지에 좀 지금 논의에서 한정해 주시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현 소위원장이 발끈합니다. ‘아니, OTT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대로 이것이 OTT를 관장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OTT도 관장하고 있어요. 콘텐츠와 관련해서 부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방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미디어법을 윤 정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방통위의 본연의 임무,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통위 역할 중에 50%가 차지하는 겁니다, 방통위의 역할이. 규제가 아니고 진흥도 아니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규제입니까, 진흥입니까? 왜 그렇게 떼어 놔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류제명 차관이 한 발 물러섭니다, ‘위원장 말에 동의한다’. 더 이상 논란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고요.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류 차관이 ‘동의는 하는데 이번 취지에

좀, 다음 논의에 하시기로 했던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유료방송……’ 해서 계속 미련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김현 위원장이 ‘정부 측 의견을 내더라도 민주당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을 많이 뺏고 있어요’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우리가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통과시켜서 이진숙 위원장 축출해야 되는데 뭔 자꾸 시비를 거냐 이겁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OTT를 넣었다가 뺐다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과기부·방통위 의견이 첨예한데 문체부하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 충돌이나 첨예한 의견 충돌을 한번 거르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국회법상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모아 가지고, 관련 부처를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속기록에서 나타났듯이 과기부와 방통위조차도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한번 공청회를 하는 게 어떠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단 알겠다 하고 넘어갔지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소집 요구 2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한다든지 의사정족수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안, 김현 의원안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안은……’, 그러니까 이게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이 안을 냈는데 위원 수를 9명으로 하고 5명으로 하고 냈는데 그냥 중간으로 하자, 7인으로 해서 민주당안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안은 4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수 있고 의사정족수는 4인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4인 이상 또는 위원장 단독 이렇게 소집 요건이 강화되고 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과반 이렇게 전부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현행법 체계에서 2인 체제가 회의를 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국회의원 지금 현재에서도 3인 추천을 하고 정권도 바뀌었지 않냐. 그러니까 대통령 몫을 임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사실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꼭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제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이제는 이유가 안 되지 않느냐. 민주당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과연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가 전혀 없다면 이 개정법안의 통과와는 별개로 현행법에 따른 위원 추천 의무를 법으로 할 게 아니라 이행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아니, 위원 추천 지금 당장 국회 3인 또 대통령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형두 저희 당 간사께서 ‘그러면 4인에서는 어쨌든 상임·비상임의 업무 비중이라든가 업무 파악이 다를 텐데 7인에서 예컨대 상임위원이 2인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의결정족수는 똑같습니까,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그러니까 김현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 3인인데 3인이 안 오고 어떻게 의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최형두 위원이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임위원은 1명 오고 비상임이 3명 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구멍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최 위원 지적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현 소위원장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무너져서 문제인 거지요. 한 번도 이 규칙이 2인으로 해 가지고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의사결정을 한 적이 윤 정부 빼고는 없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을 위해 남겨 두겠습니다. 후세가 보면 선후를 분명히 좀 따져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리는데,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윤 정부가 한 일이지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제처장이 빨리 결론을 안 내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문형배 소장대행하고 김형두 재판관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왜 국회가 빨리 추천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1년여는 왜 국회는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뭐 민주당이 이용한 거지요. 예, 철저히 이용한 거지요. 왜? MBC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목소리에도 귀를 좀 기울여 달라라고 최형두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게 속도가 중요하니까 빨리 좀 회의를 끝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형두 위원이 ‘기록을 위해서 남긴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해 가지고 5인 체제가 안 된 거라고 하는데 국회가 3명을 임명을 안 한 거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 임명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몽땅 안 해 줘 버리면 우리는 추천을 해도 허사던데’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또 19조를 신설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19조에 보시면 결격사유에 공무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은 방심위원이 안 되는데 상충 문제가 있거나 또 공청회에서 약간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방심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국가가 직접 개입하게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자의 재량으로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쪽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례를 찾아보니까 2014년에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할 때 방송법을 개정해서 다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를 타법 개정 형식으로 한 선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입법을 할 때는 타법 개정의 형식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입법자의 선의라고 보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위에 심의위원회 직무 부분에 가시면 지난 법안소위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제외됐기 때문에 제외했다. 나머

지는 현행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앞서 과기부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소위 민주당이 세게 밀어붙이니까, 류제명 차관에게 물어보니까 의견이 없다고 답해요.

(「김 의원님, 황정아 의원님한테 한 30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줘야 됩니까?

(「날 새면서 기다렸는데 30분이라도 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남은 거예요? 한 25분……

그러면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 법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거버넌스 개편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권력분립과 임기보장이라는 헌법 원칙을 무력화해서 특정인을 끌어내리려는 위헌적 입법입니다.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언론의 독립은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앞서 강행한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과 함께 방송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끌어내린다면 규제기관까지 한꺼번에 틀어쥐는 방송장악 완결판이 됩니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닙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국민을 참칭하는 특정 진영에 편향된 일부 단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법을 막지 못하면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비판은 사라지며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것입니다. 내일은 신문과 디지털플랫폼 그다음은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가 차례로 장악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 시기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압박 속에서 MBC 사장에서 쫓겨난 당사자입니다. 그때 확인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원칙은 다시 세우기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특정인 축출 목적의 그런 입법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헌법 파괴와 정치 보복을 위한 흉기가 될 뿐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는 물론 독립기관 종사자 누구라도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정파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몸담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멈춰 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사람을 자르는 법, 권력의 편향을 법전에 새기는 법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승리는 잠깐의 정치적 쾌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의 기록은 헌법 위에 선

폭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법치, 방송의 독립,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조금 더 하셨으면 마지막까지 하셨을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황정아)

(18시42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황정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입니다.

(「이학영 부의장님이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관해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래 기다렸는데 굉장히 최단 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정권은 우리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의 내란 정권이 어떻게 우리 언론의 자유를 유린했는지 그리고 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한 일인지 국민 앞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지수가 급격하게 후퇴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5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43위에서 61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실제로 정부 비판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수사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편파 심의와 표적 제재가 줄을 이었습니다.

MB 정권 언론기술자 이동관, 윤석열의 술친구이자 검사 선배 김홍걸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방통위는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철저히 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내란 정권의 언론 탄압은 과거의 군부독재 시절이 보여 준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이 조항을 법률에 의하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궤변으로 악용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억압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출판법을 앞세워서 비판 언론을 정간·폐간시키고 기자들을 구속했습니다.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은 문화공보부를 통해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공보부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1973년에는 문화공보부를 신설하여 방송 정책과 방송사 감독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문화공보부는 정권 비판 언론을 철저히 검열하고 방송 편성까지 간섭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는 동양방송, 동아방송 등 민간 방송사들을 강제 통폐합해 KBS에 흡수했습니다. 공영방송은 사실상 정권의 홍보 방송이 되었고 관제방송, 땡전뉴스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국가보안법과 문화공보부가 앞장섰다면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는 검찰 권력과 방통위, 방심위가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정권 비판 언론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을 고발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 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본질은 이승만·군부독재·윤석열 정권이 모두 같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은 탄압하고 방송을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어렵게 지켜 온 언론 자유가 윤석열 내란 정권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기자 고발, 편파적 제재는 일상이 되었고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권 친위대로 만들고 정권 비판 보도를 정치 심의, 표적 심의로 제재하고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거의 비판 보도를 사과까지 하는 행태는 과거 검열제도의 현대판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명품백, 그 유명한 명품백은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되고 실체가 없는 대왕고래, 산유국의 꿈으로 부풀려졌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리며 MBC를 비롯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네 곳을 봉쇄하고 수도와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만나 자정쯤 MBC와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 줬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이진숙의 쌍둥이 남매라고 할 수 있는 김태규는 집에서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 계엄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바꿔 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도의 미비점으로 군부독재의 망령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탄핵됐고 투옥되어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국민들이 좌초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켜 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잡아넣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내란 척결을 위해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개의를 위해 최소 4명의 위원이 출석하도록 하여 합의제 기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강화하였습니다. 비상임위원제도를 도입해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거버넌스는 2013년도에 마련된 체제로 급변하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2013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유료방송, 방송진흥업무가 이관되면서 정부 전체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구현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디어 통합기구로의 개편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디어의 산업적 성격을 고려한 진흥과 미디어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된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합의제 방식의 위원회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향후 제2의 이동관·김홍일·이진숙을 탄생시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만하게도 이 법을 본인 축출법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진숙의 '이' 자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독임제적 방통위가 얼마나 많은 언론 자유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내용만 읽어도 수백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언론의 자유를 운운합니까? 과연 정상적인 정부가 할 짓이었는지 꼼꼼히 따져 보려고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별 언론 주요 이슈들을 사건별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동안 얼마나 곤두박질쳤는지 국민 누구나 보고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2인 체제를 용인한 방통위가 해 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의 주요 이슈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되새김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5월 11일 윤 대통령이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용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MB 언론장악 핵심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 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7월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MBC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돌입하고 8월 11일 아리랑TV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 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은 딱 30분이었습니다. 8월 21일에 MB 대변인으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됩니다. 8월 22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MBC 재수사 명령이 들어왔고 8월 25일 경찰에서는 대선후보 검증을 빌미로 악의적인 방송을 한다면서 더탐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8월 29일 서울시에서는 TBS 출연금을 전년 대비 88억 원을 감액한 232억 원을 편성합니다.

9월 3일에 윤 대통령은 방송의 날 행사에 불참하며 축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

일 감사원은 KBS 감사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9월 22일, 역사적인 날이지요.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MBC의 첫 보도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검찰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제기한 방통위 그리고 심사위원 첫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대통령실에서 MBC에 발음을 특정한 근거는 뭐냐라고 질의서를 통해 보도 경위를 추궁합니다. 9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 명이 공영방송 간판 내려야 한다면서 MBC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9월 28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에서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국민의힘에서 MBC 사장 등 보도관계자 4명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10월 4일은 문체부에서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를 전시했다는 이유로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내립니다. 10월 11일 한전KDN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YTN 주식 21.43% 매각 추진을 공식화합니다. 10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11월 9일 대통령실에서는 '편파 방송 시정조치 없다' 이러면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합니다. 11월 11일 국세청에서는 MBC 세무조사 520억 원 추징금을 부과할 것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지원금 없애는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됩니다. 11월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 광고제품 불매운동을 언급합니다. 11월 18일에 윤 대통령은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조치에 '헌법 수호의 일환이다'라는 망언을 합니다. 11월 18일에는 '지금 군사정권이에요?'라면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MBC 기자와 설전을 벌이고 11월 18일에는 대검찰청에서 민주당의 기자실 기자회견 요청에 출입구 봉쇄를 하면서 검찰 기자단이 반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11월 18일에는 시민 5만 명이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에 MBC 기자 징계 절차를 요청합니다. 11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일본 산케이 편집인이 한일 언론포럼에서 '한일 관계 기묘한 안정감'이라면서 현 정부를 호평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 우려에도 청담동 술자리를 했다면서 더탐사를 또 형사 고소합니다. 12월 2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윤 대통령은 MBC를 향한 공세와 차별을 철회하라는 두 번째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12월 7일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침입 혐의로 더탐사를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KBS·MBC 이사진을 가리켜 하나도 못 먹고 있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12월 19일 외교부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MBC에 정정보도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12월 22일 국민의힘은 시사프로 패널 여야 균형을 맞추라면서 주요 방송사에 공문을 내립니다. 12월 29일 법원에서는 더탐사 기자·피디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 주요 프로그램이 폐지됩니다.

여기까지가 2022년도 일지예요. 너무 많아 가지고……

2023년도에는 1월 2일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해서 조선일보와 그 유명한 신년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1월 5일 검찰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KBS

기자를 고소합니다. 1월 12일 대통령실에서 통 크게 결정했다면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락합니다. 1월 19일에는 검언유착 의혹을 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2월 3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 뉴스를 내보낸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를 형사 고발합니다.

2월 5일에는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 검찰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방통위 국장을 구속 기소합니다. 그리고 2월 22일 법원에서는 더탐사 기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하고 3월 8일 검찰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현직 교수를 구속 기소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제안을 통해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여론 수렴을 시작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3월 13일에는 감사원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시작합니다. 3월 21일에는 TV조선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조건부 없이 방통위로부터 4년 재승인을 TV조선이 받아 냅니다. 그리고 3월 2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3월 29일 법원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4월 12일에는 검찰에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고요. 4월 12일 언론재단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기자의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그리고 4월 20일 문체부에서는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라면서 범정부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4월 27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요.

5월 1일 감사원에서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5월 2일 검찰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5월 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자화자찬 절대 안 돼’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5월 3일에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47위로 전년 43위보다 더 내려갑니다.

5월 10일 검찰에서는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해서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요. 5월 22일에는 정부 여당 압박 속에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이 중단됩니다. 5월 30일 날에는 경찰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합니다. 5월 30일에 윤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킵니다.

6월 5일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6월 20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KBS, 민주당·민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2TV 민영화를 주장합니다. 7월 5일에는 방통위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퇴장 속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합니다.

○의장 우원식 황정아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황정아 의원 예.

○의장 우원식 무제한토론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의원 토론을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황정아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언론의 자유를 파괴해 온 그 사건들의 일지를 죽 한번 읊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5분의 1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방통위는 언론탄압, 방송장악 첨병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원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임제를 산파할 수 있는 현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바꾸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언론탄압, 방송장악을 누가 또 하면 합의제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버넌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장악에 이렇게나 많은 목소리들이 공청회와 시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것입니다.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은 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면직·파면될 사유만 남은 자입니다. 위증으로 거짓말로 지금까지 진숙산성을 쌓아 왔지만 결국 경찰에서 그리고 유성경찰서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반대 이유가 만약 이진숙 지키기뿐이라면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진숙을 관련도 없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까지 막아 가며 왜 지켜 주려 하는 겁니까?

이진숙은 자신 인사 운동의 일환으로 고영주, 김문환, 차기환, 박천일, 김광동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고급 음식점에서 자신의 법인카드로 고가의 음식을 제공하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MBC는 2002년 1월 1일부터 법인카드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내규에 따르면 ‘법인카드 발급 대상은 임직원 및 부서이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법인카드의 사용은 회사 경비 지출에 한한다. 윤리·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금하며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사용 제한 또는 사용자를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은 당시 휴일에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빵집·카페·식당 등에서 식비 등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서울 시내 내지 수도권 백화점·마트 등에서 식료품·외식 등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MBC와 대전문화방송이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의 휴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거의 매주 휴일 피고발인의 주거지 인근 빵집·식당이나 서울 시내 수도권 백화점에서 계속해서 업무 관련 모임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그 사용 내역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퇴직 전에는 한 달가량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고 제주도에 놀러 가면서 법인카드를 긁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때문에 이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파렴치범을 옹호하기 위해 전혀 관련도 없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가로막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선열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언제든 독임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통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정부 비판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수사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편파 심의와 표적 제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듯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는 학생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개의를 위해 최소 4명의 위원이 출석하도록 하여 합의제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비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디어의 산업적 성격을 고려한 진흥과 미디어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거버넌스는 2013년도에 마련된 체제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유료방송·방송진흥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부 전체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구현에 어려움이 있어 미디어 통합 기구로의 개편이 절실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해 김구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여는 밀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황정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쉽겠네요.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19시11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영 의원, 김준혁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봉 의원, 전진숙 의원, 한민수 의원, 이해민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12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9시2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8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6)

(19시30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8)

(19시32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0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문진석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문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수집·관리·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허영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개정안에 재정경제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수정하며,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유상범)

(19시35분)

○의장 우원식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의원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은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내팽개쳐졌으며 외교와 안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께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셔야 될 현실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은 경기 부양이 아닌 경제파탄 정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려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나 세수는 턱없이 부족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올해 1415조 원에서 불과 몇 년 뒤 1789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장 우원식 유상범 의원님, 잠깐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의원 예.

○의장 우원식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9시 38분에 문진석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의원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처음으로 D1 기준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등의 부채를 합한 D2를 합하면 이미 저희들 국가부채비율은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IMF가 규정하고 있는 D2 부채를 이제는 현실화한다면 국민들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랏빚을 약 400조 원이나 늘리고 성장률 추락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도 못한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동결시키거나 대출을 묶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렸습니다. 벌써 표 장사라도 할 심산인지 부채가 160조 원이 넘는 LH로 하여금 기본주택 135만 호 건설을 직접 시행하도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그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잡혔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흐른 지금 거래량은 줄었는데 강남 옆 동네인 성동·분당·송파 지역 아파트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공급 대책과 더 센 규제 예고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랏빚을 늘리는 확장재정과 무조건 잡고 보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엔진 재점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건설현장 인명 사망 사고에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하자 연간 최대 15만 명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는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의 150여 개 공사 현장이 단숨에 멈췄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만 명의 인력과 하청업체들이 모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를 가능케 하는 고강도 법 개정까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역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현실화되면서 현장은 대규모 일자리 손실과 공공사업 차질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상품권, 농어촌 소득 지원, 각종 바우처 사업 등 실질적 경기 부양 효과가 확인되지도 않는 선심성 소비 정책의 남발로 곳간에 숨어든 쥐처럼 나라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경제는 특정 계층 한정 포퓰리즘 구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는 어떻습니까?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8월 26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하여 합의서가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 모 의원도 이번 관세협상이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면서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22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관세협상 타결 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부분은 차관과 보증, 일부 투자를 포함한 걸로 예상했다고 비망록에 적어 두었으나 나중에 미국이 보낸 MOU에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협상의 실체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미국과 무엇을 협상했단 말인가요? 협상을 하긴 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음과 끝이 완전히 상반되는 말을 하면서 그 누구도, 책임 있는 그 누구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협상의 결과가 뭐가 문제였는지 여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협상이 잘된 것으로 믿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곧 낮춰지는 걸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협상이 사실과 달리 합의된 게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시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로 자동차 보조금에서 한국산을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반도체지원법으로 한국 기업에 과도한 기술 이전,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에는 15%의 자동차 관세를 발효한 반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급격하게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협상 이후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은 사전 통보 없이 사상 최대 규모의 현장 단속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투자 요구로 일하러 간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손발이 쇠사슬로 결박된 채 구속되는 굴욕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대미 외교가 교착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지난 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패싱했습니다. 정부의 아마추어식 외교 행태와 안갯속 관세협상으로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돌파하여 1405원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은 안보 불안을 넘어 자해 수준입니다. 북한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알아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모두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대북 전단을 입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위에서 뿌리는 풍선이 항공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코미디같이 북한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온갖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평화통일 지향 기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의 두 국가론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남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는 자를 통일부 수장으로 앉힌 정부, 과연 그들에게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은 무너졌습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진숙 후보, 음주운전·학생체벌의 최교진 교육부장관, 보좌진 갑질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이와 같은 연이은 참사에도 이재명 정부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술 더 떠 인사 검증, 낙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그림자 실세, 만사현통의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불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이재명 방탄에 이은 새로운 방탄 시리즈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는 국정감사에 나온다고 밝혔다고 하였으나 과연 나올지는 가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윤미향 등 파렴치범들은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놓고도 이재명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고 감옥이 아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과 독선이 불러온 총체적 국정 파탄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국민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차분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은 단순한 지연 전술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정 파탄을 막아 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저희가 마지막 수단으로써 국민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회법은 이틀 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께 알려 드린 문제가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의 사실상 부속법입니다. 국회 상임위와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며 국민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형태로 한다면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 우려가 커지고 국가 재정과 예산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위험이 느껴집니다. 남녀 사회 갈등의 악화가 우려되고 국가통계의 신뢰성 하락까지 걱정됩니다. 국가 존립과 국민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회법도 이와 같은 정부조직법의 사실상 부속법으로서 그 내용은 상임위의 종류와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여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 및 각 분야 전문가의 고언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아무런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가끔 언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저서인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 독립의 아버지인 토머스 제퍼슨이 한 경고를 늘 전해 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 다수의 폭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작 2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념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도 아니었고 국민적 요구가 컸던 사안입니다.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그런 정부조직 개편안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7일에 발의됐는데 151일이 소요되고 5개월이 경과된 2023년 2월 27일 날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무려 13개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개편안입니다. 9월 15일 날 법안이 발의되었고 9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서 필리버스터를 거쳐서 26일 날 처리됐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기 전인 지난 9월 10일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고 그에 대응해서 금융위 개편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합의가 민주당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금융위 개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법안은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게 되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관련 부분을 떼 내서 기획예산처로 변경을 하는데 금융위 개편안은 6개월 뒤에 법안이 처리된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금융위에서의 국내 금융을 떼어서 재정경제부로 이관시키고 금융위를 나누는 이 법안,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부조직의 혼란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15일 민주당은 금융위 개편까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원으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바꾸는 그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에, 그 오전에 갑자기 당정대가 모여서 금융위 개편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추석 전 밥상에 검찰청 폐지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을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고 여당이 합리적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몰고 가다가 본회의 상정 직전에 결국은 금융위 개편 취소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정부조직 개편 전 과정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얼마나 졸속 추진인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극심하게 이념

적·종교적 대립을 이루는 사안입니다. 논의를 거듭해야 되고 국민들의 갈등이 가장 큰 부분인데 야당과의 단 하나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하나인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부서를 툭 떼 내서 환경규제를 주로 하는 환경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규제를 주로 하는 환경부에 에너지 공급을 주로 하는 부서를 놓는다면 공급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각종 국가하천의 관리책임을 과거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더니 국가하천의 고수부지 이용에 관해서 어마어마한 규제가 생기면서 많은 지역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만 살짝 바꾸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결국 강제로 축출할 것입니다. 오늘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과연 한 명의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한다고 그 사퇴를 강요하기 위해서 법안을 새롭게 만들고 마치 그 법안이 기존의 조직과 새로운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이 모습,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개정, 그것을 어떻게 저희 야당이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국회법은 여야 합의하에 양 간사가 서면동의 형태로 위원회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전체회의에서 바로 심사 의결해 왔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에 있어서 통상 의원 10명 이상의 발의를 거치는 발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여야 합의가 있는 경우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를 하는 형식을 취해서 위원회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처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된 법안은 민주당에서 별도로 발의를 했어야 합니다. 여야 합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당 간사의 서면동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2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문진석 수석과 허영 수석이, 민주당의 문진석 수석과 허영 수석이 서면동의 형태로 법안 초안을 제출하고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과거에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돼서 그동안 법안 발의의 형식이 아닌 형태로 이 법안을 만들어 낸,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 냈던 관행은 여야의 합의를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발의를 통해서 이 국회법을 발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한해서는 서면동의 형식을 취한다는 그 형식만을 이용해서 야당 간사인 저를 빼고 민주당의 간사 둘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을 철저히 위반한 것이고 그동안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한 여야 간 합의에 의한 서면동의 제출이라는 관행을 완전히 오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은 찬성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한 논의를 하자고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법안은 이대

로 상정됐고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 정부조직법이 이렇게 졸속으로 10일 만에 처리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은 모두 잘 아십니다. 민주당은 공공연히 선언을 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마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해체를 올려놓겠다 이 목표를 위해서 이 정부조직법은 졸속 처리된 것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미명하에 10일 만에 이 법안은 졸속으로 처리됐고 결국 그 과정에서 금융개혁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에서 그토록 검찰개혁이라고 외쳐 왔던 검찰청 해체가 과연 개혁이었는지 아니면 개악이었는지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많은 자료 중에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자료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형사부 검사의 하루'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8년 차 형사부 검사다. 정치 사건은 전혀 해 본 적이 없다. 한 달에 2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니 공판부 재직 기간을 제외하면 족히 1만 건 이상은 처리했을 것이다. 오늘도 야근 중이다. 검사실은 야근이 일상이다. 8년 동안 내가 해 온 주된 일은 기록을 보고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인데 혐의가 불명확하거나 혐의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더라도 경찰 수사에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을 하게 하거나 내가 직접 보완을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사건의 99%를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하는 일을 아주 소박한 언어로 페이스북에 올려 놓은 내용입니다.

'현재 나의 전담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최근 내 방에서 장기미제라고 불리는 오래된 사건들 중 하나를 처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수십 명이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수십억 원을 사기 친 사건이다. 범죄자들은 아직까지 활개 치며 잘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화가 난다. 내 주변의 평범한 형사부 검사들은 대개 이런 상황에 분노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상응하는 고통을 범죄자들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살다 나오면 되니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라고 생각하겠지. 범죄수익을 빼앗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경찰이 범죄수익금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다. 이대로는 범죄수익을 빼앗을 수 없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것 같아 생략한다'.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두꺼운 기록을 뒤져서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범죄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범죄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계좌 압류, 자동차 등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조금이나마 이 나라에 정의가 구현되었기를. 이제 검찰개혁을 하고 보완수사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데 보완수사를 못 하면 이런 사건은 어쩌지라는 답답함이 밀려온다.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혐의는 입증되니 그냥 기소하면 충분한 것일까? 정치 사건만 못 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정의 구현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일까?'.

두 번째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좀 더 일상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도 불과 지지난주 처리한 사건이다. 식당 앞에 놓인 프라이팬을 훔친 혐의로 송치가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프라이팬을 주인 허락 없

이 가져간 것은 맞으니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을 신상품 기준 3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피의자는 프라이팬이 너무 낡고 찌그러져 있어 버린 물건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삼 년 전에 구매한 것이라고 한다. CCTV 영상이 있는데 화질이 흐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프라이팬이 꽤 낡아 보인다. 허락도 없이 남의 식당 앞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것은 잘못이지만 식당 안도 아니고 식당 앞에 있는 물건이면 주인이 버린 물건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피해금을 3만 원으로 책정한 것도 과해 보인다. 피의자는 고령이고 전과도 전혀 없다. 절도로 기소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해자 상대로 프라이팬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당시 프라이팬이 있던 곳을 촬영해서 버린 물건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라고 했다. 보완수사 결과는 이랬다. 현장 사진을 봤더니 프라이팬이 있던 곳 주변에 낡은 화분대, 장판, 낡은 타이어 등 폐기물로 오인할 수 있는 물건들이 함께 있었다. 프라이팬 사진은 확보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삼 년 된 물건이고 가게 밖에서 쑥을 태울 때 사용하는 프라이팬이라고 하니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의자의 처지가 딱했는지 피해자도 선처를 바란다고 한다. 결국 보완수사 결과 경찰은 절도 혐의가 명확치 않다며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다.

비교적 훈훈하고 원만한 결말로 이끈 것 같아 나름 보람 있는 사건이었다. 앞으로 보완수사 요구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해진다'.

글이 좀 깁니다. 세 번째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건은 너무나 많다. 하루에도 몇 건씩 보완수사 요구 내지 보완수사를 한다. 매일 몇 개씩 이런 글을 쓸 수 있다.

나는 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부터 검사가 꿈이었다.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을 검사로 썼고 검사가 뭔지 알게 되었을 때도 검사가 꿈이었다. 나는 한눈을 판 적도 다른 일을 해 보겠다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1%의 정치사건이 아닌 99%의 민생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내가 택한 검사라는 직을 천직으로 알 뿐이다.

옆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옆방 형사부 검사도 다르지 않다. 밤낮으로 사건 처리에 고심하는 우리는 그냥 피해자들의 고통에 상응하는 고통을 범죄자들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분노를 하며 밤을 새며 보완수사를 하는 어느 형사부 검사다'.

민주당은 검찰을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이라고 규정을 하고 조작수사를 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 가는 조직처럼 호도했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입니다만 25년 5개월을 검사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도 검찰개혁에는 찬성을 합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서 마치 경찰처럼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확증편향성에 빠질 우려가 참으로 큽니다. 절제하고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검사든 경찰이든 공수처 검사이든 누구나 다 그런 확증편향성에 빠질 우려가 생깁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비난과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25년 5개월의 검사 생활을 한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소위 인지수사권은 이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동

의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형사부 검사가 행사하였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는 인지수사권, 직접수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OECD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어느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호도하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주게 되고 또 그동안 수십 년간 검찰이 보여 줬던 어찌 보면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견제로 인해서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모든 수사권을 빼앗는 것처럼,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공소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부 검사가 쓴 내용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이 형사부 검사는 노곤함만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이닥치는 사건을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고 도망가는 범죄자를, 피하려는 범죄자를 처벌할까 이것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가진 검사입니다. 저도 초임 검사 시절, 어린 검사 시절에 겪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어느 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간통죄로 해서 사건이 송치되면 간통 당사자들은 모두 구속돼서 송치되던 시절입니다. 94년쯤 됐습니다. 30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남녀는 여관방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양쪽 당사자가 실질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부인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배척하고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제 자신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갔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함께 잡힌 남자를 상대로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아무리 방에 같이 있어도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병원에 보내서 건강 상태까지 검사를 시켰고 그래서 비록 같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통죄에 있어서는 실질적 성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법리적인 기소에 이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진상을 규명해서 석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사한 것이 구속사건이지만 이것이 보완수사권입니다.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수많은 형사부, 경찰에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기소될 것이 기소되지 않은, 기소될 것이 불기소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형사부 검사의 손을 거쳐서 기소되거나 또는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왔던 것이 불기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뀌고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기능마저 없애면, 공소청에서 이 기능마저 없애면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역량, 특히 민생 범죄와 같은 역량, 아까 이 검사가 언급했듯이 나이 많고 힘없고 어디 식당 앞에 버려진 프라이팬을 들고 가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더 조사할 수도 없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소하거나 그냥 불기소할 텐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의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처리하라고 하면서 기소했

을 겁니다. 한 단계 더 조사·수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범죄는 제대로 방지되지 않을 것이며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우리가 말하는 속칭 수사지휘권이지요 이것을 살려서 경찰에서 하는 사건은 이제 법률적으로 경찰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말고 전건 송치를 해서 한 번 더 검사의 검토를 받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경찰수사 그리고 검찰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요구의 과정을 거쳐서 사건처리가 단순해지고 또 그 사건처리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을 해체한다고 검찰을 개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검찰을 해체하고 개혁했을 때 그것이 국가의 범죄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만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조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 검찰권 행사의 방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검찰개악의 방향으로 또 어느 한 변호사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문을 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또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글을 쓰고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던, 국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몇 분의 글을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검찰청 해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소장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 변론을 하는 등 참 역할을 많이 했던 김예원 변호사라는 분이 특히 지금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의 분리이 개혁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글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청 해체법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려셔야 되겠나,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려서야 되겠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가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 국제기준상 명확하다.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책임자가 명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대단한 평가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효율적인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사 책임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을 둘러싼 우려는 적지 않다.

먼저 법률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절차가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전부 송치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검토해 보완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고소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떠넘기는 사이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법률비용은 증가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유형별로 수사기관을 나누어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가 병존하는 구조다. 사건의 관할부터 헷갈리고 절차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법률 대응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와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 기소든 불기소든 전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중에서 사건을 보완수사하거나 또는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수사지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소와 불기소를 판단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경찰, 검찰, 법원.

여기 PPT 좀 하나 올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구별하게 되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피해 당사자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공소청이 되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불기소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제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법안 형식은 저기를 보시면 경찰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곳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수사위원회는 행정관료 조직입니다. 행정조직입니다. 이들이 복잡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 수많은 기구를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중수청을 설치했는데요. 중수청이 아마 중대범죄수사청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서 항고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은 상위기관인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고등중수청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기록이 가는 형태의 내부 이의신청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역중수청만 있을 뿐이지 고등중수청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없는 장삼이사는 어떻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 어느 분이 얘기하시대요.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는 중국의 형사사법시스템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으로 단순화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70년간 정말로, 김예원 변호사가 말했듯이 복잡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효율적으로 수사책임자가 정해지고 또한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해서 그 효용성, 뛰어난 범죄예방 능력을 칭찬해 왔던 구조를 이렇게 일거에 바꿔 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재 검찰청의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내립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내리면 그 사건은 검사 자신의 사건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그 지휘권

이 내려가면 그 수사를 했던 경찰관한테 그 사건이 내려가고 경찰이 사건 수사를 하면 바로 수사 지휘를 한 검사에게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 수사책임자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처리 지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나서 검사에게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사가 보기에 수사가 미흡해서 보완수사를 내리는 순간 그 사건은 검사 사건도 안 됩니다. 보완수사가 내려가도 과거에 수사했던 경찰이 그 사건을 또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수사의 책임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수사의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사건처리에 대해서 누구도 열의를 갖지 않고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겠다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수사책임자가 불분명해진다.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대한 권력을 신설하는데 이 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수사정책과 법령 제정·개정, 심의사건 조사와 처리까지 전방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그냥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이라고 합니다. 수사권은 강제처분을 동반하고 또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경찰이라고 합니다. 그 앞의 교통경찰들, 행정하는 경찰들 이런 사람들은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이 사법경찰은 그래서 과거에, 행정경찰은 경찰서장,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만 사법경찰이 하는 사건의 지휘는 그래서 과거에 검사한테 받았던 겁니다. 지금 검사가 했던 사건에 대한 조사와 감시, 지휘 감독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곳에서 하겠다고 이 법안이 나온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사 통제는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려면 개개의 사건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수사와 증거를 점검하는 고난이도의 노동집약적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사위원회의 관계자가 경찰보다 더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 증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수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2024년 한 해에만 고소 48만 건, 고발 9만 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많은 사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내용 통제 없는 수사권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김예원 변호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이 역할을 약 2000명의 검사들, 그중에 아마 형사부 검사들이 한 1000명 되지요? 1000명의 검사들이 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 소위 사건에 대한 판단, 필요하면 보완수사 또 필요하면 사건 송치 명령,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해 왔던 일을 국가수사위원회가 한다고 합니다.

11명의 수사위원회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경찰서 관할마다 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둬야 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국가수

사위원회는 저는 중국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경찰 수사를 장악하고 중수청 수사를 장악하고 공수처 수사를 장악하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검찰이 담당해 온 공익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지금 검사들이 단순히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 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지정 청구…… 민법상 친족법에 보면 친권상실, 후견인 지정과 같은 경우에 관계자들이 부재할 때 공익적 이유로 검사가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되면 검사들의 이 역할은 폐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검사에게 그 모든 기능을 다 빼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줬는데 집행·관리 기능만 주고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전문가 조직이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후견인 지정 청구 등은 사건 기록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공익 기능이다.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가진 이 많은 기능을 알지 못하니까요. 오로지 검찰청 해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다 보니 이러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뜻이 좋고 이념이 좋아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한다면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고 범죄 억지 능력 그다음에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화를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도 검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을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뒤 항소조차 하지 않은……

이건 항소가 아닙니다. 항고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뒤 항고조차도 하지 않은 검찰의 침묵은 권력형 범죄에 공조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약자에겐 무관심하고 권력자에겐 유약한 검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검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방향처럼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제가 보여 주는 저 장면, 저 화면을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주해야 될,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마주해야 될, 범죄자로서도 마주해야 될 그러한 장면입니다.

검사가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기록 자체에서 판단해서 기소 의견이다 싶으면 기소하고 또 검사가 아주 나태한 검사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는 대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 오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판사가 잘 판단해 주겠지' 하고 기소를 하면 그 당사

자는 2년 뒤, 3년 뒤 무죄를 받았을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 금전적 손실, 가정의 파괴,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검찰 공소권·기소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당사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엇을 남기고 지켜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개혁은 혼란만 남긴다. 울림이 있는 소리입니다. 제도는 허무는 것보다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 목욕물은 버릴 수 있어도 아기까지 함께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하는,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건을 했던 변호사가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청 해체, 공소청 설치와 중수청 설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가 더 망가지지 않고 그나마 그 효율성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내용의 언론 인터뷰가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 빨리 부연설명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 수사 없는 기소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서민의 권리다'. '검찰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7월 11일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 그랬습니다.

'이번 입법 중에 수사 절차의 기본 틀인 형사소송법의 수사 부분을 들어내며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수사절차법이라는 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수백 개에 달하는 특별법은 여전히 검찰에 고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법률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다'.

정비는 하겠지요, 1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과연 어떻게 정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의 공익적 기능 역시 사라질 우려가 크다. 지금도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 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등의 공익적 사법절차는 검찰이 역할을 해 왔다. 이 역할을 누가 이어받을지에 대한 설명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

1년 동안 과연 이 모든 법안을 정비할 수 있을까요? 1년 가지고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법안들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토론을 외면한 채 무조건 추석 전 전부 통과를 공약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가 언론에 추석 전 검찰 개혁 약속을 국민께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주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죄질 나쁜 범죄자들이 도망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결국 그것은 집행하는 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 3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로 인해서 2년간의 계약기간이 4년 의무화가 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서 살던 사람이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구조가 발생했고 전셋값 폭등이 발생했는데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실행을 했습니다만, 결국 천사의 모습으로 법을 실행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인 돈 없는 임차인이 더 나쁜 곳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고 전세보증금이 급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추석 전 전부 통과라는 공약을 시행하고 과연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되고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모습이 더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보호하는 국가 권력의 핵심이다. 정치적 선전구호나 이상적인 실험 대상으로 다룰 수 없는 국가의 본질이기 때문에 실무와 법이론, 제도 간 정합성을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법안 추진 방식은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저보다 한참 경력이 짧은 변호사이기는 한데, 저보다 어느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 변호사 같은데 이 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굉장히 진정성 그리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변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은 정교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정교해야지요.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재판, 형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정밀한 구조이며 하나의 절차만 바뀌어도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변화시킬 필요가 발생했더라도 충분한 점검과 논의 속에 이루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형사절차는 일단 한번 얽히면 개인의 의지로 돌이키기 어렵다. 설계가 서툴면 그 결과는 곧 국민의 불편이 되고 불이익이 된다'.

절절히 옳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저 PPT에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 경찰 그리고 중간에 검찰 그리고 법원. 경찰의 수사와 송치, 검찰의 검토와 기소, 법원의 재판. 그리고 재판 결과에 검찰의 집행, 이렇게 효율적이고 단순하고 또한 범죄 예방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 그것이 고작 1%에 불과한, 검찰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에 직접수사권의 행사가 부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외면 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쪽은 언제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최고의 로펌의 변호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들은 이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자기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사회의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도 법적 구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구조 속에서는. 이 김 변호사님은 바로 이렇게 복잡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사회적 약자가 가장 피해를 본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정보에 어둡고 도움을 청할 인적 자원이 없는 평범한 서민들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가진 자들은 법 제도의 허점 앞에서마저 일정 부분 자신들을 방어할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말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이들에게 형사사법의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알지도 못했던 변화가 하루아침에 그들을 덮친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 사라진 1차 수사 통제장치, 길어지는 수사 기간 속에서 피해자들은 지쳐 가고 가해자는 빠져나간다’.

현재 수사권 조정 또는 검수완박이라고 하지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지휘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형식으로 바뀌면서도 이미 과거보다 2배, 3배 많은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경찰에서도 사건 처리가 무한히 늘어나고 있고 검사들도 사건 처리가 한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수많은 변호사들이 검찰청·경찰청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 중 가장 큰 내용이 사건을 빨리 수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검수완박 이후에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가 지금 이와 같은 검찰청 해체 법안은 완전히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그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만드는 입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의 개념에 대한 오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4개 법안의 핵심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오히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프레임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럽연합의 38개의 국가 중에서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한 형사사법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기초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이 수사지휘권의 문제가. 그러나 이와 같은 검사, 검찰 제도의 개악을 막으려는 지난한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단순한 선택 권한이 아니라 수사를 통제·감독하는 책임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기소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인데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기소를 위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 법안들을 보면 이제 검찰은 공소청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눈으로만 읽고 설령 그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의심스러워도 물어보거나 보완하지 말고 그대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가? 결국은 돈이 없고 정보도 어둡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는 평범한 서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입법안은 검사의 수사 통제 기능을 없애면서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고 정의롭지도 않다.

현재 경찰 불송치 사건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 송치돼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조차도 불가능해진다.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과 같다.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송치 이후 검사에 의한 재검토와 정리 과정은 형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 단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지금 이 글에서 수사지휘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과거의 시스템을 검수완박을 통해서 한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불송치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160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입건 전 종결 등을 제외한 약 125만 건이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고소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22% 남짓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 약 75% 이상은 단순한 피해자 신고나 주변인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있어야만 사법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구조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을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초기에 배제시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폭력 사건에 휘말리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범죄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받았으니까,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맞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고 신고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하면 일종의 고소 고발의 한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신고로 접수되는 순간 이것은 그냥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면 나는 범죄를 신고했으니까 고소 고발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고로 되면 경찰은 인지한 사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정식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을 때만 고소 고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김 변호사의 얘기는 그런 사건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소위 말해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찰에 사건이 올라가서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그런 일반적인 신고 사건은 그런 이의 제기 절차도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정보를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혹은 법률적 조력을 구할 여유가 없어서 단지 신고에 그친다라고 우리 김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대부분 내가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본 것을 신고를 했으면 내가 신고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다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 모든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를 해도 검찰에 기록이 다 갔으니 그 부분을 검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이것은 또 다른 제도입니다, 지금 것은.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신고를 했던 부분들은 아예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이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은 이후 절차에서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간주된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가 사실상 자원과 정보의 격차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법 앞의 평등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바라는 것은 복잡해지고 수사 구조가 과거와 달리 전건 송치를 안 하고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통제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의신청 제도에서 실제로는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순 신고자로 평가받으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단순했던 때는 모든 기록이 송치가 되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요.

수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 조직 안에는 뛰어난 수사 역량을 가진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처럼 인지수사에 능한 부서에서는 때때로 검찰 특수부 못지않은 전문성과 집요함이 발휘된다. 하지만 수사 시스템의 설계는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도의 정상 작동 여부는 최상위가 아니라 하위 평균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경찰 수사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18개 시도 경찰청이 있다. 각 시도 경찰청 산하에서는 경찰서가 총 259개 존재한다. 그 안에서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은 약 3만 6000명이다. 수사관의 역량 차이가 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과부하와 경력수사관의 수사 현장 탈출 현상으로 하향 평준화 경향도 커졌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뽑거나 뽑힌 사람을 잘 교육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리스크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얼마만큼의 자원과 집중력으로 다루느냐는 결국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갈리는 구조가 돼 버렸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는 1년, 2년 지연되는 사건을 빨리 수사해 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 주고 사실상 결정문까지 써 준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사관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건, 눈에 띄는 사건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외면받는 사건이 생긴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노약자이거나 사건 규모가 작고 사회적 관심이 적을 경우 수사가 아예 시작되지 않거나 진행이 더디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변호사라도 선임된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 사건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 참고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든지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가 없는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구조에서는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떻게 수사되는지도 모른 채 처리 결과만 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입건조차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는 사건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하다'.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경찰 수사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는 합리적 대안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검찰의 직접인지수사는 없애되 일반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포함한 모든 1차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을 검찰이 다시 보게끔 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 본연의 목적인 법률 전문가로서의 수사통제 기능을 강화하면서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일반 국민

들도 그 절차를 예측하기 수월한 방법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내용을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저도 검찰의 직접인지수사는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시스템이 훨씬 편하고 일반 국민들의 구제가 어렵지 않고 또 법률가로서의 검사가 수사통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 구조는 방금 김예원 변호사가 얘기한 이와 같은 구조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떠받치는 양대 축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며 손을 맞잡고 완성하는 게 올바른 구조다. 경찰과 검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한쪽을 악마화해 없애는 것이 과연 평범한 시민을 위한 개혁일까. 복잡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 기능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은 수사기관들이 협력해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를 원하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자신의 사건이 방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이념이 아닌 작동하는 시스템을 원한다는 점을 입법자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들을 쓰면서 핵심을 굉장히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야 하는지까지 대안을 잘 제시하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7월 25일도 유사한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론 인터뷰 내용이 점점 강해지고 메시지가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지금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종결권은 검사에게 주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한다. 그리고 기소 전 보완수사를 허용하되 보완을 핑계로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서 보완수사는 동일 범죄로 한정하고 별도로 인지한 사건은 다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개혁법은 지옥문을 열 수 있다', 지옥문을 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절박감을 나타낸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시즌 2라 불리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여당 쪽에서는 10월 추석 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 형사사건 해 본 사람이라면 검수완박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낳은 부작용을 다 알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 같은 형태의 검찰개혁법이 통과된다면, 글쎄……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을 고르다가) 지옥문이 열린다고 말하고 싶다', 굉장히 고민하다가 표현한 단어입니다. 지금의 검찰개혁법, 지옥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이 보호해야 할 최약체 피해자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야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법을 찾아낸다'. 맞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는 언제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자신의 범죄는 숨기고 또 피해는 언제든지 막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평범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하위 15~2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는다. 사건이 터져도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고 변호사 살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복불복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미 설명해 드린 많은 내용이고 이 제도를 통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힘없는 자들은 계속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불복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이 좌우된다는 거다. 범죄 피해자가 되면 진술도 하고 증거도 내야 하는데 웬만큼 똑똑하다는 사람도 쉽지 않다.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회적 약자들은 더 어렵다. 괜찮은 수사관을 만나면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그냥 허공에 붕 뜨게 된다'. 이게 일선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을 하면서 경찰수사관들을 접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채팅하다 만난 남자에게 모텔에서 1차 성폭력을, 이 남성이 데려간 고시원에서 남성의 친구로부터 2차 성폭력을 당했다. 경찰은 1차는 합의로, 2차는 합의가 아닌 것 같다고 봤다. 예전처럼 사건이 통째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록을 보다 1명을 무혐의로 할 게 아니라 두 사람 간 통화 내역 추적 등을 통해 공모관계를 수사해 보라, 두 사람이 비슷한 수법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해 보라 같은 지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경찰에 사건종결권이 있으니 무혐의 처리한 기록을 빼고 뒤 사건만 검찰에 송치한다'. 사실은 만일 2명의 가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이 같이 송치가 된다면 당연히 2명의 범행을 금방 확인할 수 있지요. 통화내역만 분석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인데 그것이 사전에 합의되고 사전에 공모가 없었으면 이런 식의 범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딱 분리가 됩니다. 지금 제도에서 그렇습니다. 저 제도로 공소청 제도가 되면 이의신청도 없고 이 불송치된 사건은 아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뒤 변호사만 웃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불송치하고 하나는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사실무가 중요하다. 경찰이 뒤 사건 기록만 보내면 검찰은 어딘가에서 뚝 잘린 불완전한 기록만 본다. 사건의 완결성이 떨어지지만 검사는 굳이 보완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보완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내면 그때 검찰에서의 사건번호는 사라진다. 다른 할 일도 많은 경찰이 이미 끝났다 싶은 사건을 또 열심히 볼까. 보완수사한 사건이 다시 검찰에 갈 때는 어느 검사에게 갈지 모른다. 이런 과정이 겹치면 챙겨 보는 사람이 없는 사건들이 생겨난다. 지금도 이런데 검찰개혁법은 보완수사 요구조차도 막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과거에 검사가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는 경찰에서 올라온 전건을 봐서 수사지휘를 다시 내립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그러면 수사지휘를 내린 그 사건은 검사의 사건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도,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남아 있고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지휘권에 지정한, 규정한 내용대로 또 적시한 그 수사 방법대로 수사를 해서 다시 그 검사에게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지휘권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검사와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서 어쨌든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공소청과 중수청에 의하면 이제는 보완수사권조차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기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전에 모든 사건이 검사 책임이니 열심히 기록을 봤다. 뭔가 미흡한 게 있으면 경찰에 내려보내라고 하고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독촉도 받는다. 검사의 인사평정에 이 과정이 모두 반영된다. 그러니 검사들이 열심히 야근하는 거다. 지금은 보완수사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내는 순간 내 사건이 아닌 게 된다.' 그런데 지금 또 바뀌는 검찰, 검수완박 시즌2는 그 보완수사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기자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도 못 하면 검사는 더 무책임해지는 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생각해 봐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굳이 내가 할 이유는 없다는 게 인간 본성 아닌가. 보완수사 요구를 막으면 이제 이 부분을 보강하면 더 확실히 유죄를 받아 내겠다 혹은 여죄가 나오겠다는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누가 웃는가? 범죄자 그리고 변호사다. 누가 울겠는가? 범죄 피해자, 그것도 돈과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많이 웃었다라는 얘기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피해자 측 변호사가 몇백만 원씩 성공보수를 받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에 자동 송치됐는데 검찰개혁법에 따르면 불송치나 불기소 때 지방중수청에, 중앙중수청에, 국수위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 단계마다 별도의 법률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이다. 최악의 경우 범죄 피해자는 3, 4년 정도의 시간과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람직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범죄 피해자들이 답답한 심정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도 답답하다. 수사종결권이 있으니 불송치하면 불송치 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그 정도의 형사법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요즘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딱 넉 줄인 경우가 많다. 고소인은 이렇게 주장한다, 피고소인은 저렇게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 고로 불송치한다.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돌아설 피해자가 있을까? 경찰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취업사기 피해자'라는 농담도 나온다. 수사하러 왔는데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검찰개혁이 경찰로서도 달갑지 않다는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류 차이가 있다. 상층부 기획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야 검찰과 경찰 간 기관의 대등한 위상 확립이 목적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수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말하면 경찰을 늘려 주고

대우를 잘 해 주면 된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한 조직이고 검찰은 수사 통제를 위한 조직이다. 조직의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제도의 본연, 검찰제도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서서히 수사 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검찰제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래서 그 검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되면서 인지수사에서 엘리트들이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서 민주화 이후에 오랜 기간 검찰의 인지수사권, 직접수사를 통해서 사회적 거악을 척결하기도 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도 직접 관여하면서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느새 검찰 내에서는 형사부 검사들은 그냥 늘 송치되는 사건을 들고 씨름하면서 지내는 일반 속칭 땅개 검사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주 상대적으로 검찰조직 내에서 각광을 받거나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로 치부가 되기도 하고 소위 특수수사라고 하는 인지수사권, 직접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기류가 형성되면서 점점 검찰의 인지수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상당 기간 특수부 또는 금융조세부라는 인지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내 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특히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하면서 정치적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결국 그것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20년 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말까지 검찰 내에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을 수사하는 인지수사 때문에 지금 이 정부는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서 가장 중요한 검찰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각살우라고도 하고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도려내고 제대로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지난 70년간 보여 주었던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능한 자원에 의한 헌신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무죄율을 기록하는 이러한 뛰어난 형사사법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의 부족함 같은 것은 이의신청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아까 설명한 내용이 다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어이없는 얘기다. 형사 사건 중 고소 고발로 시작되는 건 20% 정도다. 나머지 80%는 단순 112 신고, 경찰의 현장 단속, 변사체 검시, 언론보도, 진정서, 투서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검찰개혁법을 보면 이의신청 자격을 고소·고발인으로 한정했다. 내가 주로 맡는 제삼자의 112 신고로 시작된 장애인, 노인학대 사건은 이의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이의신청자도 법마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기자가 '법의 완성도가 떨어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9일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법을 정독했는데 이의신청을 두고 중수청법은 고소인·고발인이, 국수위법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즉 중수청은 고소·고발인만, 국수위법은 고소·고발인·피해자까지 포함됐습니다. 검찰개혁법 내

에서도 정리가 안 된 거다. 발상과 접근법 자체가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쪽에만 쏠려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완성도가, 이의신청권자에 대해서도 각 법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 정도 지적을 받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공소청 검사가 싫으면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수처 검사로 가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라고 말합니다. ‘공소청 검사 하면 일체의 책임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 업무량에서 20~30% 정도만 남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신의 직장이 된다. 중수청 수사관 안 가면 그만이다. 강제로 보낼 방법도 없다. 공수처 임기 연장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는 3년짜리다. 아니면 국수위 사무처 직원, 글쎄 누가 가려 하겠나’.

‘검사 무력화에만 너무 초점을 둔 검찰개혁안이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애초에 근대 형법에서 검찰제도를 만든 이유가 뭔가. 1차 수사기관의 폭주, 잘못, 오류 같은 것을 잡아내라는 거다. 그러려면 사건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예전에는 검찰이 경찰의 내사종결 사건까지도 들여다봤다. 혹시라도 묻히는 사건이 없나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는 거다. 그런 소임을 다하라고 헌법에다 검찰총장 이름을 명시해 두고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는 명문 규정을 넣어둔 거다. 지금 검찰개혁법은 이 틀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헌법상 검찰총장을 법률상 공소청장으로 고쳐 부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얘기가 나온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정치검찰 비판을 의식한 검찰도 늘 형사부 강화, 그러니까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내용적 통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들을 해 왔다. 그런데 지킬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김혜원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 또한 정치검찰에 몹시 분노한다. 많은 잘못을 했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해법이 검사 바보 만들기인 건 아니다. 정치검찰이 밉다고 검찰을 무력화하면, 그래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내용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기소를 못 하거나 형량이 줄어들고 심지어 무죄까지 나올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뒤 형사부 판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의 리뷰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바람에 사실관계, 증거관계가 법리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재판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말은 판사들의 불만인데 이 얘기는 검사들이 책임감 있게 기록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철학적 명제 중에 존재가 인식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그 사람의 업무를 대하는 자세, 열정, 헌신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죄가 있어 보이니 무죄를 선고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공소제기 이

후에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갑갑하다는 거다. 단순 절도 사건인데도 쟁점 정리가 안 돼서 법정에 증인을 오륙 명씩이나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재판이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이익을 보겠나. 특수부 검사가 밉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검찰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자신의 경험과 구체적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중대범죄로 줄여 놨는데도 검찰이 이를 뚫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수사지휘라고 정리했으면 끝날 사안인데 막판에 검찰에다 특별수사권 일부를 남겨 주고 경찰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경찰에는 수사종결권을 주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면서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됐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수사통제 기능에는 눈 감고 이런저런 새 기관 만들어 봐야 절차만 복잡해지고 비용만 많이 든다.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에 제일 먼저 나가떨어지는 건 사회적 약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제도가 복잡해지고 여러 기관이 난립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책임 소재도 불명해지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문제라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없앤다. 아예 어떤 경우에라도 직접수사 개시는 안 된다고 명문 규정으로 못 박아도 좋다. 대신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없애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송치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만 한정한다. 보완수사 중 별도로 인지하게 된 범죄 혐의 수사는 다시 1차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 본인의 주장은 간단하다. 1~2%의 정치 사건이 못마땅하다고 예전에 98~99%의 사건에서 무료로 누려 왔던 형사법적으로 잘 훈련된 검사의 수사통제라는 양질의 법률서비스까지 내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편으로는 경찰 비대화 문제를,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을 거론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니 '우리나라가 한 해 범죄 건수가 160만 건이다. 이 가운데 10% 정도에서만 내가, 우리가 피해를 당해 봐야 국가가 제대로 들여다봐 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불만이 쌓여 간다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지금 검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건 많은 국민도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 거기다 민주당 대통령에다 압도적인 민주당 국회다. 검찰개혁 추석 전에 끝낸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변호사로서 일선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싸우고 그들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본인이 느꼈던 경험 그리고 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또 정밀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은 찬성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에 대해서 동의

하지 못한다고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국가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이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야 당연히 추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검찰이 밉다고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이 보여 주는, 직접수사권을 폐지시킨다고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민생범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그것을 폐기해 버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김예원 변호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 힘없는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을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추가로 또 한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공소청·중수청이 설치가 되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도 지금 경찰에서는 검사와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10중 통제를 받고 있는 프로세스에 있다 그러면서 설명한 자료를 PPT로 띄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가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청은 거짓말 좀 작작 하시지요. 기자들 불러 놓고 이런 표를 보여 주면서 이번 검찰개혁안 통과돼도 무려 10중 수사통제가 되니 아무 걱정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10중 추돌사고보다 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하나하나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1번과 4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1번은 영장청구와 관련돼서 영장 관련 보완수사요구권을 규정하였다.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시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이 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통제를 받는다고 하고 있는 설명자료고요.

4번은 보완수사요구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요구권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일단 1번과 4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니 경찰수사는 통제된다고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극심한 수사 지연과 검경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핑퐁으로 사건이 증발되는 문제들이 이 보완수사요구라는 희한한 제도 때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수사통제라니요?’라면서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수사지휘처럼 구속력이 없어서 대충 해서 보내거나 몇 개월 뒤에 보내도 검경 다 책임이 없다. 보완수사 기록을 원래 기록 위에 턱턱 올려서 편철해서 유의미한 내용도 없이 사건 기록만 두꺼워지고 지저분해져서 오히려 사건 파악이 어렵다. 검찰이 보완수사요구 보내면서 검찰 사건번호 사라지면서 검찰은 손쉽게 손 털 수 있고 다시 검찰에 돌아와도 그 요구 보낸 검사에게 배당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사지휘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 더 얘기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수사통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일선 변호사가 경험하는 보완수사요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적확하고 아주 솔직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7번·8번·9번 이것은 똑같은 걸 왜 쪼개 놨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2번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7번 재수사요청, 8번은 기간도과 후 재수사요청, 9번은 송치요구권. 맞네요, 2번은 송치요구권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이네요.

'재수사요청이랑 시정요구조치 좀 수사통제 그만 갖다 붙이세요. 불송치사건 중에 재수사요청은 3%도 안 되고 재수사 안 해서 송치요구한 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 160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죽은 제도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었냐 하면 수사지휘 없어져서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즉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모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속력도 없고 사건 내용도 바뀌는 것도 없고 생으로 검경 서로 감정만 상하는 제도인데 그게 무슨 수사통제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검경이 서로 싸우거나 담당수사관이 징계받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사건검토라고 그래서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은 90일간 검토하기 때문에 경찰수사가 집중통제를 받는다고 경찰이 설명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송치사건 기록을 송부받고 90일 안에 잘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면 된다고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원래 등본 송부해야 되지만 복사하면 흐려지고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원본 송부를 하는데 그건 경찰 기록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 기록에 연필로 밑줄도 못 긋고 포스트잇 한 장 못 붙이는데 어떻게 그걸 읽고 잘못을 잡아내라는 거냐? 누누이 말하지만 그건 한강 물에 맨손으로 손 넣고 고기를 잡으라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걸로는 수사통제가 안 된다. 검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합니다. 3번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3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합사건수사, 사건경합 시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수사 우선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10중 통제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하네요, '사건경합 시 검사 수사권이 우선이라니'.

5번은 기소 그 자체가 통제라는 그 평가가 말이 되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직접수사 개시권만 없어도 충분한 것을 괜히 수사 통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완수사까지 다 막아 두고 그냥 송치된 사건 읽으면서 기소·불기소 도장만 무력하게 찍는 것에 불과하다, 그게 무슨 수사 통제가 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번의 이의신청도 수사 통제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의 신청하면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도 없어진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검수완박 시즌1에서 경찰의 불기소·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돼 가지고 그 기록을 검사가 재검토해서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무혐의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의신청 제도인데……

한번 저 앞으로 넘겨 봐 주실래요, PPT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제, 검찰 해체를 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하게 되면 경찰 사건은 국가수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들어가고 지역중수청 사건은 중수청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되지 않는 구조로 바뀐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베테랑 법률전문가도 쩔쩔매는 이의신청사건 검토를 중수청 직원이나 국수위 사무처 직원이 대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게다가 앞으로 이의신청을 세 바퀴 네 바퀴 뺑뺑이 돌리잖아요. 희망고문이다. 신청권자도 아무리 넓게 잡아야 국수위법에서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딱 거기까지만 인정해 주고 신청기간을 빡빡하게 만든다면 의미가 없다. 불송치니 이의신청이니 이런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의신청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써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 생업에 치여 한 번의 이의신청마다 수개월씩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의 대응을 포기하게 하는, 법률비용만을 치솟게 하는 최악의 제도라는 거는 이미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밝혀졌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들면 변호사들 배만 불리고 서민들의 억울함만 쌓이는 나쁜 제도라고 말합니다. 이걸로는 결코 수사 통제가 될 수 없다, 즉 이런 제도에 대해서 경찰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10개의 수사 통제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수사 통제도 기능을 못 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9월 7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또 여러 가지 있어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든 동의를 하지 않든 김예원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한 번은 귀 기울여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가 복잡해지고 권리구제 수단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 약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김예원 변호사의 외침, 지금과 같은 검찰 해체 제도로 가게 되면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이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관철하려는 검찰개혁 법안의 문제점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하는 1차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 형사법 체계가 그렇게 개편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했으니 그 권한을 분산한다는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사라는 개념이 복잡하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표현을 쓸 때의 수사란 보통 인지수사, 즉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것이었다. 수사를 개시하는 방법에는 고소·고발·신고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1~2% 분량 정도다. 그런데 나머지 98~99% 사건의 수사 통제 기능도 없앤다는 것이다'라고 결국 수사 통제 기능이 없어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수사 통제라는 것이 보완수사권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수사 통제란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시 보면서 잘못되었거나 위법한 부분,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다. 보완수사란 검찰까지 일단 도달하는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다. 지금 법안은 검찰까지 넘어오는 사건의 숫자 자체를 굉장히 줄이겠다는 것이다. 1차 수사기관에서만 수사했다 덮는 암장 사건이 아마 70%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김예원 변호사는 결국은 이 수사 통제라는 것이 보완수사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번 검찰개혁 이후에 무죄율이 높아질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판사가 사무실에서 결정하는 약식명령 사건이 있지 않는가. 다툴 여지가 별로 없는 약식명령의 무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저도 법조계를, 실질적으로 실무를 떠난 지 오래돼서 전체 추세를 몰랐는데 아마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약식명령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 같은 가벼운 사건을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를 하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판사가 그 기록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즉 검찰에서 200만 원 정도 벌금형을 구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식명령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 없이 기록만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 약식명령 되는 사건은 범죄 혐의가 조금 다소 미흡하거나 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이것이 무죄로 가는 예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이 약식명령조차 무죄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건이 약식명령처럼 될 것이다. 이러면 복잡한 사건은 유죄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겠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경찰이 대충해 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경찰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담당하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면 담당 검사의 사건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전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을 때는 해당 검사의 사건으로 계속 잡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사건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담당 검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건 이번 법안이 통과된 다음도 아니고 바로 지금 얘기다'.

그러니까 현재 검찰청 해체법이 아닌 상태에서도 지금 보완수사요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예원 변호사는 결국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수사지휘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사 핑퐁, 사건이 검경을 오가며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 입건 자체가 안 된다. 무엇보다 사건이 갈갈이 쪼개진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다. 장애인들이 다니는 보호작업장의 관리자가 장애인 여성들을 자꾸 성추행하는 인물이었다. 피해자가 A, B, C가 있었다. 그런데 고소인이 나란히 손잡고 가서 고소장을 내지는 않는다. A가 고소하니 B, C는 따라서 뒤늦게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제

는 이게 사건 하나였다, 가해자가 1명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사건들이 다 따로 처리된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피해자 3명이고 가해자가 1명인데 각자 고소하니까 사건이 3건이 된다? 원래 1명에 대한 사건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진 의원님?

(「예, 설명을 너무 잘해 주고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김예원 변호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을 각각 다른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 1명을 각각의 다른 경찰이 수사한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도 재배당이 안 된다. 수사관이 너무 일이 많다. 기존에는 수사지휘를 통해 이런 부실한 수사를 막을 수 있었다. 수사지휘라는 게 무슨 갑질이 아니고 수사통제를 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다. 법률 전문가에 의한 수사통제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살려 두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검찰에서 특수사건…… 일반적인 중요 사건을 제외하고는 직접수사를 없애고 그다음에 경찰의 불송치제도를 인정하면서, 종결권을 인정하면서 과거에는 검찰로 갔어야 할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다 보니까 경찰이 사건처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건을 안 하기 위해서 사건을 쪼개는 모습은 거의 경찰들이 태업을 하는 수준에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이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지금 가장 검찰청 해체법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과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의신청을 백날 천날 해도 기소권자가 그 사건은 절대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니 사건을 읽고 보완하는 기능을 완전히 날려 버리는 것이다. 경찰청이든 경찰서든 변호사가 봐도 사건을 잘 봐 주지 않는다. 입건조차 하기 어려운데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겠나. 일반 국민이 자기 사건을 얘기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무엇이 개혁인가. 이제 1차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기소 이전에 수사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은 국수위만 남는다, 그것도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건만'. 그리고 이의신청을 국민이 할 수 있는 사건은 넓게 잡아도 전체의 50%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이제 이의신청하는 사건조차도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오면서 권리구제가 훨씬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수사 통제를 중수청과 국수위가 할 수 없다는 것이냐?'. 분명히 이의신청은 중수청과 국수위에 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사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는 '중수청은 못 한다.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수사기관은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 근대 형법이 발전하면서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이 생겨난 것이다. 그럴 때 국수위가 역할을 한다는 논리

인데 국수위도 못 한다' 단정을 합니다. '국수위 구성이 11명이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 1년에 5만 건이다. 그걸 모두 들여다볼 여력이 없는 건 둘째 치고 능력이 안 된다. 이의신청된 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높은 법률 전문성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조사관 같은 실무자들이 할 것인데 법률을 십수 년간 공부한 검사보다 전문성이 있을 수가 있는가? 못 한다'.

당연합니다. 사건 수사기록의 검토는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 진술과 증거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가 갖고 있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고도의 능력을 갖고 엘리트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데, 이것은 훈련받지 않고 법률지식이 없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수위에 수많은 사람을 붙여 놔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1차 수사기관인 경찰, 중수청 아무도 통제를 못 한다. 그리고 사법통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 약자, 정보가 없는 약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분은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많이 했거든요.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보통 신고를 하거나 제삼자가 고발해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을 해 준 거지요.

그랬더니 이 질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설계했을 리가 있나?'라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쭉 설명을 들어 보니 이거 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느냐라고,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 입장에서 일반인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법안을 짠 사람들은 수사 실무를 생각하지 않은 일부 경찰 엘리트들이다. 희망사항을 다 집어넣었으니 체계 정합성이 안 맞는다. 절대 경찰이 무능하고 검찰이 유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하자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효율성만 강조하면 검찰 같은 기관 안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이것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김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 얘기를 하는데 1%의 부작용을 희석시켜 99%의 일반 수사까지 같은 결로 얘기하는데', 간단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통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 지금 검찰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통제인데 이것을 1%의 부작용만 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권만 가지고 일반화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을 많이 만들면 경쟁적으로 일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된다, 사회적 주목 받는 사건에만 경쟁을 하겠지 동네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목을 하겠는가라고 비판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검찰 특수부가 휘둘러 온 직접수사 개시권만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는 대안이 뭐냐라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예원 변호사의 답변이 아주 명쾌합니다.

전건 송치해서 검찰이 보완수사하게 하자, 수사통제 기능을 남겨 두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즉 보완수사권, 즉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지휘권이라는 수사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것을 기소권자가 해야 하는 이유를, 검사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기소할 것 아닌가, 사건을 파악해야 기소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능이다,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다, 진영논리와는 상관없다, 일반 국민들의 삶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월 9일 자 언론 인터뷰한 내용인데 아마, 제가 우리 진종오 의원님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종오 의원 의석에서 —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이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언론 인터뷰는 보니까 보완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서로 간에 설명을 하는군요. 법률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이 뭔지 보완수사요구권이 뭔지 인지수사권이 뭔지 이것 일반인이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긴요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국민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모순적이지 않느냐?

수사·기소 분리에는 찬성을 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서로 모순된 내용 같지요. 그러니까 기자가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통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소 분리론에서 말하는 수사는 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 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하면 무조건 검사가 하는 모든 수사, 모든 걸 다 빼앗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김 변호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부족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법률전문가로서 보완하여 제대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또 하나의 수사권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권이 아닌 거지요. 수사·기소 분리에서 말하는 수사권이 아니라 법률 오류와 사실 누락을 메워 기소의 질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평가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수사지휘처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 핑퐁과 지연 처리, 수사기관 간 책임 회피가 발생합니다. 그사이에 피해자는 소진되는 것이지요. 김 변호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완수사요구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제도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은 주고 있고 보완수사권은 주는데 보완수사권은 그나마 수사 통제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지만 보완수사요구는 수사지휘권

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니까 경찰도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그 사건을 보완수사요구한 검사는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핑퐁이 되고 또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두는 거지요.

이미 새로운 사건이 와서 그 사건을 수사하도록 집중하다 보면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돌아온 사건, 이미 나는 처리했다고 하는 사건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아서 돌아오면 귀찮으니까 손을 안 대고 이렇게 돼서 책임 회피가 생기고 그사이에 피해자는 늘어나는 사건처리시간 때문에 지치고 고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형사사건의 99%가 국민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이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전체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현실을 잘못 알고 있지요.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완수사까지 폐지된다면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느냐라고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타격은 서민들의 생활밀착형 사건이다. 권력자들의 사건이야 보는 눈이 많아 열심히 수사하게 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에 입건조차 시키기 어려워졌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주로 대리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렵고 상흔, 행동학적 증거, 장기간 반복 정황을 종합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해야 그나마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시설 내…… 시설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 보호시설을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들어가 있는. 시설 내 학대, 직장 내 성범죄, 보호작업장 추행 등 폐쇄적인 환경의 범죄, 이런 범죄는 내부고발 정황증거 보강이 핵심인데 보완수사 없이 기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서민 대상 경제범죄는 경찰에서 처리 자체를 어려워해서 검찰에서 범죄일람표를 새로 작성하는 등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형해화되었고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됐고 실제로 수사 통제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경찰에서 잘못 판단한 사건 또 잘못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검찰에서 정리해서 사법적 통제를 해 줬는데 제도가 바뀌면 이 제도하에서는 그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즉 사법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요.

기자는 또 ‘장애인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더 크냐?’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기 때문에 장애인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경험해 볼 때 장애인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더 크냐고 물어볼 만한 내용이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이다. 장애인 사건은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에 기댈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다. 대체로 CCTV나 녹음파일 확보, 통화 내역이나 문자 기록 확보, 간병일지나 상담일지 압수 등 강제수사가 큰 역할을 한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진술할 때 옆자리에 앉아서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잡한 수사를 하는데 공백이 발생하면 이 공백을 메우

는 장치가 기소권자인 검사의 보완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장애인 학대 사건 중 경제적 학대 사건, 즉 경제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아주 곤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학대 사건으로 되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 즉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 정신지체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몰래 절도하면 과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아서…… 하여튼 절도, 재물손괴 등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그런 사건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뀐 지가 꽤 됐는데 경찰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고 잡아내서 기소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에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특히 지금 현재 검사에게 인정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공소청과 수사청의 제도가 갖고 있는 형식으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많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국가적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질문이 많네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지하철 안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된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지원한 적이 있다. 앞에 서 있는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 증거가 자술서 하나뿐이었다. 문제는 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글을 작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필사만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조차 추행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건이었는데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입건한 것이다. 이 장애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수사기관이 작성해서 건네준 자술서를 열심히 따라 적어서 제출한 것이었다.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자술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수년간의 피의자의 글씨 연습 노트와 당일 동선, 주변인의 진술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학대 의심 아동의 경우 시설 측의 자해 주장에 대하여 검찰에서 전문가를 참고인 조사하는 보완을 통해 시설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결국 학대행위자를 기소할 수 있었던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을 행정부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한 김예원 변호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중수청을 왜 만드냐는 것이다. 지금 현재 안으로는 중수청이 수행하려는 역할이 1차 수사기관인지 수사통제기관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경찰과의 관할 중첩, 책임 회피, 수사 지연

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예산은 많이 드는데 업무구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

어떤 업무로 하게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거지요.

경찰과 다른 1차 수사기관이 생기면 하부 운영지침이 달라져 기관 간 실무의 차이를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피의자들의 시도에 오히려 대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안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기관이 난립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 법률비용이 폭증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예상하는 중수청은 아마 1차 수사기관인 것 같은데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했던 그러한 중대한 범죄의 수사를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수청도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도 똑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관할이 중첩되는 거지요. 그러면 범죄를 악용하는 자는 양 기관 중에 자기가 훨씬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또 같은 사건을 경쟁적으로, 중첩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그 역할을 더 하려고, 본인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려고 국수본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무리한 수사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법률 비용이 폭증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한 너무 복잡해진 기관의 난립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 과거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예원 변호사는 계속 전건송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있다, 그런데 왜 전건송치를 이렇게 계속 주장하느냐? 이렇게 충분히 의미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 변호사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사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자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수사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자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김예원 변호사에게 전건 송치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예외적 구제 수단일뿐 보편적 권리 보장의 경로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요.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단순한 112 신고, 현행범 체포, 불심검문, 단속, 변사체 검시, 보도나 진정으로 인한 수사 등 매우 다양한 수사의 단서 중에, 이 많은 단서 중 고소·고발인 등 일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에 그 외의 사건은 평등한 수사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김예원 변호사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네요. 현재는 고소인만 이의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삼자인 고발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이의신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 검수완박 때 사회단체에 의한 많은 고발이

있다는 이유로 무의미한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고발인에 의한 이의신청권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자기가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조력자 또는 변호사를 통한 고발을 해 왔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아주 많았었고 그 비판이 정당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건당 수백만 원은 들고 수개월 간 대기 시간을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한다. 지금은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그 사건이 어디로 넘어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진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검찰청 해체가 돼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도 그 이의신청은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보는 것으로 현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의신청을 공소청에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등의 수사권을 다시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수사권을 주지 않고 이의신청에 의한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김예원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건 송치는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다. 이미 건국 이래 70년간 유지되어 온 방법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검사들에게 수사 통제를 고르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송치받는 사건에 대한 수사 통제에 집중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해치지 않되 기본권 보장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설계가 전건 송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길 경우에 사건 핑퐁을 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가 당연히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가 폐지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경찰이 죄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이 사건 송치를 해서 검사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기소할 정도의 증거가 없고 증거가 매우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하면 보완수사 요구도 못 하고 보완수사도 못 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사들은 본인이 유죄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보통은 기소를 합니다. 즉 적어도 90% 이상의 유죄 확신이 있을 때 기소를 하게 되는데 검사가 스스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실해서 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바뀐 제도에 의해서 공소청 검사로서 한다면 이제 수사를 아예 못 하고 보완수사도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냥 범죄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검사가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봤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러한 경우는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 민생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범죄자일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 안 되고 증거에 모순점이 발견됐을 때 이 범죄자를 석방시켜 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아마 엄청난 범죄 피

해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김예원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의 제도가 되더라도 최소한 보완수사권은 남겨 둬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건 송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다. 검찰에 힘 실어 주기도 아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겪은 사건도, 피해자가 없는 사건도 즉 마약이나 환경, 동물학대 등 사건이 예가 됩니다. 이런 사건들도 추가 비용 없이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자동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전건 송치 싫어합니다. 지금 불송치 사건이 많아지면서 사건이 어마하게 줄었는데 지금 전건 송치 실시하면 과거 제가 검사 시절에 했던 한 달에 200건 또는 300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검사들도 사건이 줄어서 야근도 없고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예원 변호사의 이 판단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 급격한 검찰청 해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권법센터의 대표를 맡으면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 장애인 사건을 대변하고 공익변호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회에서 약자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범죄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를 실무 변호사로서 아주 정확하고 또 굉장히 냉철하고 분석력 있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박탈하는 것이, 인지수사 기능만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완수사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없애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말하는 보완수사권은 바로 경찰 수사 사건의 사법적 통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죄지은 자가 풀려나거나 억울한 자가, 억울하게 구속된 자가 기소되지 않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건 송치 제도로서 지금 잘못된 제도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변호활동을 했던 김예원 변호사가 변호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청 해체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에 대해 변호사 실무자로서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헌법학자로서 지금 현재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공청회에 차 교수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한 자료 중에 간단히 정리된 자료가 또 쉽고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검찰개혁을 하는 목표가 과연 검찰의 무력화냐 아니면 국민의 인권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을 개

혁해서 그것이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고 국가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가는 것이지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작용의 궁극적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인권 보장뿐이다. 수사와 기소는 각기 국민을 위한 활동이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 효율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관련 법안의 입법 이유에서 말하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보편적이라는 것도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검찰에서 수사검사와 공소검사가 분리되어 있으나 공소검사는 수사의 세밀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중요한 사건일수록 수사검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할 때 과연 공소유지의 효율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사·기소 분리의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는 영국에서조차 중대비리수사청에 조직적·지능적인 경제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사·기소 분리를 이른바 검찰개혁의 절대명제로 전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권한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면 그 오남용 문제를 통제해야지 기능 자체의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권 보장의 요청에 반한다’라고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는 신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중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라면 신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신중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검찰청 폐지가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 및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법률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국민의 인권 보장에 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의 주된 기능은 경찰의 수사 지휘 및 법률적합성을 통제하고 수사 관련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경우 등에 주력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99%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1%의 사건을 하는, 인지사건 수사를 하는 부분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인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중지되고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범죄로부터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약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차진아 교수의 입장입니다.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전건 송치, 보완수사권의 부여 그리고 복잡한 1차 수사기관의 난립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헌법 전문가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돼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형사법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지금 현재는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수사 과정을 아는 검사가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법원의 영장심사 이상의 통제 기능을 갖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 검사에게는 사실은 법원 판사의 영장 심사 정도의 통제 기능밖에 없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인 경찰의 주장에 근거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과는 별도로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신속성과 밀행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수사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라는 소위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 검찰청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하는 영장청구권으로서의 통제 기능의 역할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헌법 89조 제16호에 따른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으로 공소청과는 그 조직의 성격과 권한이 다르다. 따라서 검찰총장과 공소청장은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차진아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9조 16호의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찰청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임의로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려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제89조 16호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헌법상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반론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는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검찰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이고 공소청은 수사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성격과 권한이 다르다, 따라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헌법상의 기관을 법률로써 바꾸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 헌법에서 대통령이라고 명시한 것을 헌법 하위의 법규범인 법률로써 총통이라고 바꿀 수 있겠는가, 헌법에서 국회라고 명시한 것을 법률로써 인민회의라고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즉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총장의 직무와 법률 개정을 통한 공소청 검사, 공소청장의 직무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권한으로 갖는 검사이며 이를 전제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이 예정하는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굳이 명칭을 바꾸려는 것도 검찰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법률로써 그 실질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다.

설령 명칭이 같더라도, 다시 말하면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검찰청, 검찰총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성격과 권한의 변화는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차진아 교수는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성격과 구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의 수사기관 통제를 위한 조직으로서 법안 제4조 1항에 따르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인원으로 그 산하의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하부 조직이 더 필요하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법안 4조 제2항에서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추천위원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구성은 우선적으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엄격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되어 독립기관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수사기관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감사와 감사의뢰, 감찰 및 감찰요구, 징계요구 등은 사실상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21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제22조(청문회), 제23조(방문점검) 등의 규정은 마치 국회가 국정감사나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업무 감독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고 이 국가수사위원회는 국회 소속 위원회가 아닌 정부 위원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25조 이하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과 관련돼서는 '이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오남용될 경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법률에 아무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에 구성과 운영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국가수사위원회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것은 행정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하기관, 중수청이나 국수본이나 공수처나 이런 많은 조직들은 모두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수사는 사법 작용의 일환입니다.

즉 국가수사위원회가 사법 작용을 하는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런 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은 곧 정치권력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독재를 향한 문이라고 차진아 교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이른바 검찰개혁의 1차적 목표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권에 집중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사체계상 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며 그것이 경찰청이든 국수본이든 다르지 않다. 중수청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설치하여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수사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상 국가수사위원회도 정부 여당의 영향력하에 있게 되며 이 법률에 의하면 11명 중에 9명을 정부 여당이 장악하게 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정부 여당이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향의 경찰개혁이 이른바 사법개혁과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및 법관평가제를 통한 법원 재판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 제도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는 뜻이다라고 해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자체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중수청의 모델이 미국의 FBI인지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나 염정공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BI는 연방국가의 특수성으로 탄생됐고 이를 중수청의 모델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 염정공서는 다 모두 유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비리수사청은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를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 염정공서는 수사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중수청의 법안에 따른 업무분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범죄, 중수청은 내란·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게 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수인이 관련된 범죄에서 일부는 고위공직자가, 일부는 일반 공직자인 경우에 공수처와 중수청 중에서 누가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내란은 중대범죄에 포함되고 외환은 포함되지 않는지, 죄형법정주의에 준하여 엄격하게 볼 때 뭐뭐 등

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6대 범죄, 2대 범죄 등과 관련해 문제된 바 있지만 범죄 유형 분류도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겹치는 경우 여러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탁상에 의한 업무분장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첩 등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클 뿐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세 기관 간의 사건의 이첩 문제 그리고 중첩된 수사의 조정 문제 이것이 엄청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결론적 제안을 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필수적이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등 모든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필수적이다. 최근 검찰개혁·사법개혁·선거개혁 등이 추진되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성공한 개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최근 수사 지연, 수사의 비효율성,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방치 등으로 인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국민적 신뢰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법조인은 이런 방식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나올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다행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의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의 사전적 평가는 국민들의 사후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9월 3일 법률신문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도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기관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막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권력과 밀착된 기관은 계속 바뀌었다. 예컨대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에서는 경찰이 그러했고 박정희·전두환 정부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가 그러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이 권력과 밀착된 것이다.

권력과 밀착된 상태에서 권력의 오남용이 문제되면 개혁이 필요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조직을 무력화하거나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권력을 오남용했다고 해 국가정보기관이 없는 나라 혹은 무력화된 나라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다만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면서 국민을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정보기관도 없애고 검찰도 없앤다면 과거 1공화국 당시의 권력기관이던 경찰도 없앨 것인가.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검찰의 정상화가 목표가 돼야지 검찰의 무력화, 폐지가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차진아 헌법교수는 특히 위헌적인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설시한 대로 전체 99%의 사건은 민생 사건이고 형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형사부 검사들이 밤을

새 가면서 증거를 찾고 진술을 보강하고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그 잘못된 프레임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결국 김예원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청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차진아 교수가 여러 가지 한 얘기 중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부분이 또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조금 더, 검찰청 명칭이 바뀌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반대 논리 중에서 굉장히 헌법학적으로도 또 법 논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9월 15일 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의 법문 규정에 반한다. 공소청 법안에 공소청장을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모순적이다. 입안자들도 결국 검찰총장이라는 존재를 폐지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서 헌법에서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는 검찰총장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 이런 것을 통틀어서 검찰청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부터 없애야 한다. 상설특검법도 폐지해야 하고 내란특검 등 3대 특검도 마찬가지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오류로 기소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논리인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수사하는 것 아닌가. 이 예외를 왜 인정하는가'라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권을 폐기하는 내용이고 직접 인지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보충수사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1차 경찰 수사의 사법통제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두 분의 설명은 조금씩 궤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이 마치 세계적 기준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잘못됐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경찰은 정치적 외압과 인사권 행사에 가장 취약한 국가기관 중의 하나다. 14만 경찰의 극심한 승진 경쟁, 짧은 계급정년 때문에 한 번 승진에 누락되면 만회하기가 어려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무조건 영장 청구하고 온갖 걸 다 걸고 넘어져서 큰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절대로 정권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조직이다'. 소위

말해서 경찰이 권력과 유착을 하게 되고 인사권 행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권력기관을 따르는 조직이 되고 소위 수사에 있어서 항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폭행 등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높다. 그러나 복잡한 경제범죄들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만한 법 전문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해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가해자가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그 변호인이 경찰에 가서 수사를 설계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걸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하겠나?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큰 불신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이 없다 보니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홀딩하거나 후임자에게 넘기기에 급급하다. 몇 개월 후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상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범죄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반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예원 변호사가 보완수사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도 수사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또한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검사도 그것이 자기 사건이 되지 않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건이 핑퐁 되고 또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사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차진아 교수도 이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와 관련돼서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도 아주 유사한 말을 했네요. 공청회에서 검찰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나라 망합니다라고 답하고 싶었다. 기본적인 치안이 흔들리고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지는데 민주당 개혁안대로 되면 민주당에 줄 서는 사람은 면죄부를 받고 죄 없는 사람도 민주당에 반대하면 없는 죄도 억울하게 뒤집어써서 가혹하게 수사받게 될 것이다. 이건 유신 시절보다 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과장된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김예원 변호사도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검찰청 해체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고 차진아 교수도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도가 결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차진아 교수와 김예원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세 번째로,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페이스북이나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설명하신 김종민 변호사의 여러 가지 글에 대해서 차분히 읽어 드리고 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자 김종민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사와 사건관계인에 의한 10중 통제장치가 있다며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해체해도 문제없다고 한 모양이다. 수사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통제의 의미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의 선정과 수사 방법이다. 경찰도 검찰 특수부도 이 부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과거 형사부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었을 때는 최고의 통제장치가 경찰 수사에서 작동했다. 수사나 내사 착수 대상이 적절한지, 반대로 수사나 내사해야 될 대상인데 빠져 있을 경우 검사가 이를 체크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청탁 수사다. 굳이 안 해도 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신속히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 진행을 안 하는 것도 모두 문제다.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 인지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하고 어떤 사건을 천천히 수사할까? 수사지휘 제도가 있을 때는 검사가 정기적으로 송치 사건을 관리해서 장기 방치된 사건은 경찰에 통보하기도 하고 사건관계인의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체크하기도 했다. 99%의 경찰들은 문제없이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1%가 물을 흐린다. 그 1%가 검사의 감시하는 눈이 무서워 함부로 사고를 못 쳤는데 이제는 부담이 없다.

지난 6월 의정부경찰서 수사팀장이 2억 원을 받고 뇌물공여죄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를 재배당까지 받아 가며 불송치·무혐의 처리했다가 검사의 이의신청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구속된 일이 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전혀 사건 관리를 할 수 없다. 강남서 같은 대형 경찰서의 경우 수사과장 산하에 수사관이 수십 명이 넘는다. 과장이 소속 수사관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제 불능이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통제 불능인 사건을 과거에는 검찰에 전건 송치를 해서 형사부 검사가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면서 관리하고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세밀하게 통제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사팀장 또는 수사관이 검사처럼 수사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 10중 통제장치가 아니라 수사에 관한 통제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한복 입고……

이건 빼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다시 틀어 주실래요? 다음 장, 다음 PPT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청을 해체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10중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예원 변호사가 아주 개개의 통제장치가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 사실상 100% 새빨간 거짓말이고 실제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 김종민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수사지휘권 그리고 전건 송치 이 두 가지로서 경찰들의 사건을 통제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검사의 보완수사 그리고 전건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통제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10중 통제장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김예원 변호사의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이고 수사에 관한 통제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김예원 변호사가 죽 지적해 놓은 걸 보고 났더니 결론은 사실상 영장 청구를 하는 것 하나만 의미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구나 하는 걸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검찰청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공청회에 오셔 가지고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 9월 4일 날 공청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정리도 잘돼 있고 또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수사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는 앞으로 옮기시면 되겠어요.

‘국가의 법과 제도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자 소프트파워의 핵심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잘 만들어진 제도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꽃필 수 있었던 것도 1688년 명예혁명 이후 독점권을 철폐하고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혁신가들과 기업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든 덕분이었습니다. 빈곤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비결도 국가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뛰어난 제도적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국가 개혁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당위성 못지않게 정교한 각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다 맞는 얘기지요.

‘정교한 각론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개혁이 실패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험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중대한 민생 사안입니다. 형사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환경을 잘 반영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개혁입니다.

형사사법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형사사법의 제일 사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조 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금융 사기 사건이 보여 주듯 범죄는 빠른 속도로 첨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T를 이용한 첨단범죄, 범죄수익의 해외 도피 등 범죄의 세계화도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을 해체해 기소권만 보유한 공소청으로 만들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해체되고 인권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형사사법 제도는 효과적이어야 하고 또한 언제든지 첨단범죄나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것처럼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서 수사만 하고 경찰, 지역중수청, 공수처가 국가수사위원회의 산하에서 권력자로부터 임명된 위원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변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하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것인가?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외에도 수사의 착수 여부, 참고인 조사나 각종 증거 수집에서의 위법·부당 여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수사권은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뿐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에다가 늘 주장했던 내용이 그리고 악마화했던 내용이 이거지요.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이 난립을 하게 되면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 통제가 실종된 다수의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이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공고해지면 법치국가가 실종된 경찰국가로 가게 될 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수사 통제할 기관이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9명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서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즉 정치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하수인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를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검찰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서도 법무부장관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고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이라는 정무직공무원이 권력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은 형태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권을 갖는 기관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장악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괴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수사권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분노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소식을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정부조직법을 발의해서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다수당의 모습은 아마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비판받아야만 하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받지만 우리 경찰 역시 사실상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로서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와 정보, 경비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에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집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제도,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경찰 독재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영국은 1985년 이전까지는 검찰이 없던 나라입니다. 사인소추와 경찰소추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으나 높은 무죄율 등으로 인하여 1985년 소추 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영국을 가지고 70년의 경찰, 검찰, 법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냈던 우리나라가 예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 영국의 예를 들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런 영국도 1988년 부패사건 등 중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2020년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프랑스의 국가금융검찰,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미국 연방법무부가 4년간 공조 수사를 통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총 36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무리된 이 사건은 영국에서조차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허구이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보여 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렇게 특별한 금융사건, 중대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또한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평의회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기소권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끊임없이 검찰청 해체를 주장하는 측에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추가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위인들의 말을 전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법치주의의 확립 없이는 문명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자유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평화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법은 큰 파리는 잡지 못하고 작은 파리만 잡는 거미줄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법치의 부재는 부패를 초래하고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발자크가 바로 법치의 부재를 아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 겁니다. 법은 큰 파리는 잡지 못하고 작은 파리만 잡는 거미줄이다라고 함으로써 법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말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어 정직한 사람들이 항상 패배하는 구조가 되고 맙니다.

1955년 중국의 한 농민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에 참새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모택동은 12년 내에 전국의 참새를 모두 소탕하라고 지시했고, 베이징에 참새 섬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과 참새의 전쟁을 벌여 수억 마리의 참새를 잡았지만 천적이 사라진 이듬해 봄 해충이 창궐했고 3년간 흉년이 이어지며 40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던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정치는 결과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지 의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다 같이 손잡고 천국으로 가자고 하면 자칫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 법조인들이 검찰개혁법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어제 발간된 법률신문에 법조인 1779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65.4%,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4.6%였고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두 권한 모두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13.7%였습니다. 경찰수사권의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바로 지금까지 차진아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통계로 나타난 것이고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전건 송치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 또한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사법통제가 된다고 했던 부분 이것이 변호사들의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고 관계자들을 조력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과거의 단점은 버리고,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는 버리고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공소청, 중수청을, 어떻게 사법통제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많은 불꽃이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지만 더 많은 불이 꺼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정치는 미리 내려 놓은 결론대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지나치면 결점을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채택하면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고 예측 못 한 블랙 스완의 출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법조인들이 검찰개혁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당론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런 지적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밝혔는데 제가 무제한토론 서두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김종민 변호사가 여기에서 밝힌 이 내용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인지수사권, 사실상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사냥개로써 또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써 활용되었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도 25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의 붕괴로 와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범죄를 척결하고 범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그 시스템을 지금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 차진아 교수 또 김종민 변호사가 지적하듯이 이제 검찰의 종결권을 없애고 다시 전건 송치를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공소청 검사든 아니든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주어서 1차 수사를 사법적 통제 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 이것이 검찰개혁이 가야 될 방향이고 검찰을 다시 리빌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개혁안은 결코, 대한민국을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될 것이고 차진아 교수의 말대로 나라가 망하게 될지도 모를 그러한 개악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김예원이나 차진아 교수와는 다른 내용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이 고소·고발 사건의 경찰, 중수청, 공수처 무혐의·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다.

조금은 다른 의견인 것 같기는 하네요.

지난 수십년 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 유무 판단은 검사의 권한이었고 지검 또는 지청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모든 고소·고발인은 고검에 항고, 대검에 재항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검찰 처분의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실상 사건 관계인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주었기 때문에 검사들이 또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문재인 정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권을 행사해 경찰 수사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할 수 있게 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 버렸다. 공수처법은 아예 고검 항고 절차 없이 공수처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재정신청만 인정한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고소·고발인들이 항고를 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을 고발인의 경우에는 아예 뺏어 버리고 공수처에는 항고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즉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는 쪽으로만 검찰개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기소권만 부여하면 경찰, 중수청에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이들 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처분에 어떻게 불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의신청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기소권만 부여하면 경찰, 중수청에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이들 기관의 위법 부당한 무혐의 처분에 어떻게 불복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대검에 대응하는 공소청과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만 만들고 고등공소청 설립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고검이 담당하던 항고 사건 처리가 문제가 되고 고등법원 재정신청도 항고 기각이 된 사건이 대상이기 때문에 재정신청도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가 된다. 공소청은 기소권만 행사하도록 만들었으니 공수처법처럼 곧바로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하도록 법을 만들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바쁘고 업무량이 폭주하는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으로 마비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도 읽어 보지 않고 재정신청 기각을 하겠지만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다. 고발은 제삼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논외로 치자. 종전에는 범죄피해자의 경찰 고소사건에 대해 1차로 검사가, 고등검찰청 항고 2차로 진행이 되고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3차로 진행하여 총 세 차례나 재검토 또는 불복 절차가 보장되었지만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면 경찰과 중수청 고소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도 아닌 경찰, 중수청 수사관이 잘못된 판단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하더라도 사실상 검사에 대한 불복 절차를 원천 봉쇄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범죄피해자 권리가 수십 년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개악 중의 개악이 된다.

이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무슨 얘긴가 하면 과거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 모든 사건이 전건 송치가 되니 검사가 1차 사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검토를 했는데

또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 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구제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했는데 거기도 또 인정 안 하면 대검에 재항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범죄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고소·고발인들의 권리 구제가 충분히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면 이제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즉 경찰이나 지역중수청에서 무혐의 사건 종결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검사한테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지역 중수청에서…… 아마 중수청으로, 대검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찰은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법률 전문가는 없는 거지요.

(9월27일 24시 경과)

이런 제도하에서, 이런 제도를 해 놓으니까 검찰의 수사 기능은 없고 기소 권능만 남겨 놔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건 성공했지만 사건 관계자인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범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상범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오래 계셨습니다.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한 불복 절차를 원천 봉쇄하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위헌 문제도 발생한다. 더욱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범죄 혐의 유무의 판단은 사법작용의 영역이고 지금까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이를 관장해 왔지만 이제부터 경찰 수사 실무자인 경위, 경감 중심의 경찰 형사사법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찰에서 내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검사가 다시 한번 봐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만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고소 사건의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서 검사의 2차 검토를 받지 못하게 되고, 즉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접하게 된 것이지요. 점차 경찰 수사 실무자 중심의 형사사법 체제가 갖춰진다는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강남경찰서 같은 대형 경찰서 수사과의 경우 소속 수사관이 수십 명이 넘어 수사 과정이 어떤 사건에 있는지,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챙기지 못한다.

수사팀장 또는 수사관인 경감, 경위들이 혐의 유무 판단에 대한 검사 권한을 전권을 갖고 행사하는 경찰 형사사법이 본격화되는 것이고 그 처분이 잘못되어도 효과적인 불복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검사가 행하던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국가수사위원회나 중수청 자체 내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사나 재판이나 모든 불복 절차는 심급을 달리하는 고검 또는 고등법원이 하는 것이지 동일한 수사기관이 하는 경우는 불복 절차가 아니고 불복 절차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시한 겁니다. 불복 절차를 같은 기관 내에서 받는다면 그 불복 절차를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적절치 않은 거지요.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서 검사가

지금 그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불복 절차고 과거에는 검찰에서 불복을 하면 고등검찰청에서 그 기록을 보게 함으로써 불복 절차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 이 제도에서는 김종민 변호사의 표현대로, 저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경찰의 불복을 국가수사위원회가 하는데 국가수사위원회는 사법절차에서는 어떤 역할도 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휘만 하지 사법적으로 아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 조사를 하게 한다는 발상은 수사의 ABC도 모르는 초등학생 수준의 발상이다. 연간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 4만~5만 건 수준이라 하는데 복잡한 사기·횡령·배임 등 고소 사건은 1건이 100건 이상의 무게가 있는 경우도 많아 위원회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 그 위원회 구성을 모두 법률가로 채운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법경찰이 한 사건을, 아무 형사사법시스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관리 감독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한다는 것 또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완전히 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무총리 산하 TF를 만들어 후속 조치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떠드는 형사법 학자들과 변호사들을 불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란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은 내가 안 읽어도 되는데 피곤하니까 갑자기 중단하지 못하고 중간에 읽게 됐습니다.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지요.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마치 진정한 절대 선인 것처럼 그동안 수없이 주장을 해 오면서 노력했고 결국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디테일을, 각론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나마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이 살아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김예원 변호사가 말했듯이……

갑자기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요. 좀 피곤해졌나 봅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평가한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검찰개혁법, 지옥문을 열 수 있다'. 무서운 얘기지요. 차진아 교수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9일 날 언론에 나왔는데 한국일보에서 김종민 변호사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또 의미 있게 잘 설명이 돼서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릴 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종민 변호사라는 분은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검찰개혁론자입니다, 철저한 개혁론자고. 이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를 가장 싫어하는 변호사입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부르짖던 분입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변호사가 지금 나와서 이번에 통과되는 검찰개혁법은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25일인가요, 26일이지요? 25일이군요. 자랑스럽게 검찰청 해체를 추석 밥상에 내려놓게 됐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지옥문이 정말로 열릴 것인지 하는 생각이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다시금 뇌리에서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가 2021년 수사권 조정 후에 지금 수사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는 신속성이 핵심인데 수사 적체가 심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수두룩하다. 구조가 복잡해지고 책임 있는 수사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저기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줬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자체 종결할 권한을 준 것, 즉 전건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자체 종결하고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고 보완수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수사권은 제한했던 1차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도 구조가 복잡해지고 책임 있는 수사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들이 많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옛날에는 내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주임검사로서 지휘하면 경찰에 내려보내도 사건번호가 계속 유지돼 검사 책임하에 진행되는 사건인 게 분명했다.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면 사건번호와 수사 주체가 바뀌어 검사는 경찰 수사 사건 아니냐라고 하고 경찰은 어차피 검사가 최종 결정하는데 우리가 왜 더 하느냐며 서로 나 몰라라 하면서 사건이 공중에 붕 뜨는 문제가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것이 수사 통제의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미루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문제점을 이렇게 설시한 겁니다. 설명한 거지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등에 중대 사건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아 적체가 심각하다.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 같은 극단적인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금 이와 같이 완전히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고 여러 개의 수사기관을 만들기도 전 단계입니다, 이게, 이 얘기가 지금.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미 과거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따라서 검찰의 1차 수사를 통제하고 경찰이 전건 송치를 해서 검사가 최종 사법처리를 했던, 사건 처리를 했던 그 시스템이 이렇게 한 단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시스템을 바꿔 버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걱정이 크고 우려가 많습니다. 적어도 미래세대한테 우리가 경험했던 제대로 된 형사사법시스템은 넘겨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1년 뒤에 어떤 형사사법시스템이 나타날지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경찰 개혁이든 수사권 조정이든 절차를 단순화하고 막힌 병목을 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게 방향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장애인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아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중수청이랑 경찰은 같은 사건을 놓고 싸움을 할 수 있게, 중복적으로 할 수 있지요. 또 서로 핑퐁할 수 있지요.

저 제도를 보면 과연 누가 저렇게 국민의 피해구제를 절대 못 하게 만드는 제도를 강구해 냈는지 천재적입니다. 오로지 검찰을 무력화하고 해체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제도를 설계했는데 결국은 저 설계된 제도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요원해지고 범죄자 천국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멋진 제도를 설계한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엘리트 경찰들이 저런 제도를 설계했다는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데 검찰 직접수사 폐해를 막으면서도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질문도 참 재미있네요. 직접수사를 하는 기관에는 늘 인권 침해, 편향된 수사, 청탁 수사의 위험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찰 직접수사 폐해라고 질문하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수사는 기소의 준비 단계다.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의 분리여야 한다.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표준적인 제도인데 우리와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검찰이 직접수사 인력을 보유하며 검사 본인이 수사를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직접수사 인력 없이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한다. 대신 검사와 경찰이 마치 운동회 때 2인 3각 경주 하듯 한 발씩 묶고 함께 뛰는 식이다. 그렇게 하면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도 폭주할 수 없고 수사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몇몇 개 나라를 빼놓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오랫동안 정치권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수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악마화됐고 그것이 오늘의 결과에 이르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민 변호사가 지적하듯이 검찰을 무력화한다는 목표하에 저렇게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김예원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차진아 교수의 말대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 평가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기자가 또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사권 조정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그러자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하고 대신 검찰조직 운영은 바뀌어야 한다. 검찰을 해체하는 게 답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은 보완수사할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모두 떼어 내 이를테면 중수청과 같은 특별수사청에 인력을 재배치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부가 해 온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독립된 수사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특별수사청을 아우르는 수사 지휘와 통제를 하도록 3각 균형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결국 김예원 변호사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똑같이 언급하는 것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합니다,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없애는 순간 구속된 사건이 와서 20일 동안 수사를 해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를 위한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유가 없지요.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받아서 그 사건이 혐의가 있느냐 아니냐만 판단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모순되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무혐의 석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보완하거나 보완수사 지휘를 통해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으면 죄를 지은 자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거나 억울한 자가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일은 막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지금 저 제도는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구속 사건에 있어서의 처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오로지 검찰이 수사만 못 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제도지요.

한번 볼까요?

‘프랑스에서는 검찰을 1000개의 색깔을 가진 1개의 팔레트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수사·기소 외에도 검찰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마 이 기자가 잘 아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검사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그래도 좀 설명을 듣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공익의 대표자로 탄생한 제도다. 경찰의 소추대리인인 영미법계 국가의 검찰과는 다르다. 검찰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따져 보고 개혁해야 하는데 지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검찰제도론 책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검찰의 발전상, 현대적 검찰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자꾸 검찰을 수사기관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곧 수사기관이 아니다. 수사는 검찰 기능의 일부에 불과하다. 형사소송 외 분야에서도 검사의 일이 많은데 간과되고 있다.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한다는데 이는 대륙법계의 검찰제도를 기반으로 만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2000년 유럽평의회가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권고로 국제표준을 정립한 바 있다. 검찰개혁은 국제표준에 비춰 볼 때 우리 제도는 어떻게 왜곡되고 보완돼야 하는지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버 초기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형사 수사를 하는 제도로서 검사가 역할을 하지만 민법에도 보면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규정에 검찰청 검사,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로서 공익의 대변자라는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법이나 또 다른 법에서 인정을 해 왔던 제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검찰과 관련한 3대 문제 중 첫 번째로 집권 정치권력의 인사권이 문제다라고 제시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검찰이 이렇게 개혁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이 집권 정치권력의 인사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이 절반이라고 한다면 검찰 인사제도로 인한 문제의 원인이 절반이라고 보면 된다. 예외 없이 역대 모든 정권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검찰을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인사제도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의 장 루이 나달 전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가 없다라고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찰의 독립이다. 물론 독립만 강조하면 검찰 파쇼가 될 수 있다. 독립이 전제된 아래 책임이 따르는 제도가 바람직하기에 독립과 책임을 모두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을 없애면 정치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경찰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 인사제도 독립도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경찰 인사제도가 영향력을 안 받는다라고 평가한 건가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긴 한데……

경찰 인사제도의 독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고 치안을 담당해야 되고 경비를 서야 되고 그러면서 무조건 상사의 지시에 복종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경찰에게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무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그 자체가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과 같은 사람들의 치안 방향 또 일반행정과 관련된 여러 활동, 쉽게 말하면 시위대를 막는다든가 또는 각종 행사에서 경비를 선다든가 이런 지시를 경찰이 거부하게 된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치안 자체, 치안행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찰의 인사 독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인데, '대통령이 직접 인사 할 수 있는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경찰도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살아 있다', 이것은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사무에 대한 감사·감찰, 사건에 대한 평가까지 다 할 수 있다면 결국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권과 대통령이 11명 중 9명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장악을 한다면 경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다고 하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결국은 김종민 변호사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사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전제는 좀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결국은 검사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결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라는 것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 수사는 검사가 통제하는데 검찰 수사는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아니라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위증 등 관련 인지사건 정도의 수사권은 존치하더라도 특수부 등 인지부서의 직접수사는 더 이상 검찰이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절충적으로 검찰 내부 통제시스템이라도 마련해야 된다. 고등검찰청 역할이 형해화돼 있는데 지방검찰청에서 하는 직접수사를 상급청인 고검이

들여다보고 제어를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모든 지휘가 대검과 검찰총장에 집중돼 권한이 쏠려 있다. 외부 통제 수단으로는 일본식 검찰심사회를 거론하기도 하나 피해 발생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검경을 떠나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그때그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단계에서 위법 부당한 점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즉각 이의를 제기해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 도입 등 법원의 사법통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설명이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종민 변호사와 생각을 같이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수부와 같이 정치수사를 하는 검찰의 인지수사·직접수사는 이제 폐지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형 범죄, 치밀한 뇌물사건, 거대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일반 서민이 저지르는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게 사회적으로 주는 해악성이 큽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수사를 해야만 결국 정치권력의 남용 그리고 부패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수사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찰이 그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중수청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중수청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의 수사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만일 저렇게 나뉜다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권의 남용 문제, 사법적 통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리고 이들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건 송치를 하게 한다면 결국은 소위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어려운 경제 사건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이 다소 약해질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형사사법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도가 이렇게 유지돼야만 우리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 장애인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형사사법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PPT에 띄워 드린 이 구도가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가 말하는 서구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형식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OECD 국가 그다음에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 거기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봐도 가장 유사한 게 중국 형사사법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마지막에 이걸 중국 형사사법제도라고 평가한 페이스북 글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일신문 칼럼에서는 중국 형사사법제도를 100% 따라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생각해 봤다. 전 세계적으로 검찰을 폐지한 유일한 사례는 문화 대혁명의 광풍이 불던 모택동 집권기의 중국이다. 1968년부터 모택통의 비준하에 최고인민검찰원 등이 차례로 폐지되다가 197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인민검찰원의 직권은 공안기관이 행사한다고 공식적으로 검찰을 폐지했다.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197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제도를 부활했지만 상급 인민검찰

원의 감독과 동급 인민대표회의의 지위 내지 영도를 결합하는 이중영도체제를 채택했다. 소위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각급 인민검찰원에 구성된 검찰위원회가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중국식 사회주의 검찰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중국 검찰제도에서 인민대표회의의 영도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동일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공산당과 인민대표회의는 한 몸으로 움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산당이 내리는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을 비롯한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대표회의 및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등 책임을 부담한다.

PPT 이제 꺼도 될 거예요.

최고인민검찰원을 비롯한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대표회의 및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등 책임을 부담한다. 중국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있고 수사는 공안의 권한이다. 검찰은 공안이 수사종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심사만 판단한다. 공안은 무혐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스스로 종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중국 검찰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지요?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검찰 무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도입한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에 이어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를 통한 검찰 해체는 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감독하겠다는 발상도 인민대표회의를 통해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과 기본적 틀이 동일하다. 중국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에게 투표권도 인정되지 않는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왜 검찰개혁 해법이 중국의 검찰, 중국의 형사사법제도여야 하는지.

언젠가 답변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복잡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지금 행안부장관이나 또 여러 군데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치권력이 수사권을 모두 틀어쥐고 대한민국을 사실상 경찰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큰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김종민 변호사가 쓴 발표문 중에 국가수사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저도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반헌법적인 정치적인 수사 통제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종민 변호사는 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이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및 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주권주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력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반헌법적 기구임을 은폐하고자 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본질이 사법권인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상상할 수도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직접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중국이 유일한 사례가 아닌지 모르겠다.

국가수사위원회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와 통제, 조정, 감독 및 감찰권뿐만 아니라 수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수사 관련 정책,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법무부와 행안부, 대검찰청과 경찰청, 지방검찰청의 권한을 통합한 슈퍼 수사통제기구로 만들어졌다.

명목은 수사기관 간의 조율 그리고 소위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아주 멋진 용어를 사용해서 씁니다만 그것은 독재자가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독재를 펴는 것과 같은 국민적 기만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통합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각 기관들을 사실상 권력의 개로, 권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위헌적인 기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법안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수사위원회의 권한은 너무도 황당합니다. 법무부, 행안부의 법령의 제정·개정을 국가수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 업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수사권 조정, 감사, 감찰, 불송치·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적법 적정성 조사 및 처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정치권력에 의해서 추천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위원회에 수사권에 관한 모든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독재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수사의 사법적 성격을 혼동하여 일반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체계의 원칙상 전혀 맞지 않다. 행정위원회인 국가수사위원회가 사법 작용인 수사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수사의 밀행성 원칙과도 어긋난다. 수사 기밀의 유지가 수사 성공에 필수적인데 국가수사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개입하고 증거물 제출 확인, 수사관 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대범죄 수사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정권과 유착된 부패수사, 친정권 시민단체와 관련된 범죄와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중대범죄 비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소관과 종류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과거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국회법을 개정할 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의 형태로 위원회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해 심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형식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 한 것이 아닙니다. 9월 24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저는 빠졌습니다. 문진석·허영 의원이 서면동의의 형태로 위원회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그것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검찰청 해체를 통한 공수처와 중수청의 설치 그리고 금융위의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부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의 형식으로 법안 초안을 내고 그것을 위원회안으로 하는…… 편법적인 법률안 개정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던 법안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부속 법안은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정식 절차를,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어야 될 사안을 양당 합의를 해서, 양당 합의가 있어서 여야 간사가 서면동의서를 내는 형식으로 하는 절차로 법안을 개정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절차에 문제가 크고 또한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문제점들, 법안의 문제점, 기관의 폐지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하는 정신과는 근본에서 위배되는 부분이 강하게 있습니다.

개념이 모호하고 성별의 구별이 흐려지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렬한 갈등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점차 다수결의 표결이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긴 시간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의힘은 적어도 검찰청 해체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범죄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무제한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고생하셨습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채현일)

(00시57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채현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의 찬성토론을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기에는 민생이나 또 대한민국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대형 화재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핵심 전산시스템이 이 한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행정서비스가 위기에 봉착돼 있고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당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쟁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당초의 본래의 제도 취지하고는 다르게 국정 발목 잡기, 정쟁 유도 이런 걸 통해서 가뜩이나 민생, 경제 또 외교 안보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내외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절망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언제 복구가 될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귀국하자마자 직접 현안보고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께서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하면서 적극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우편, 우체국 금융 등 꼭 필요한 서비스가 많은데 중단되거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국정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됩니다. 민생경제협의체를 작동하는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APEC이 10월 3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짓도 안 남았습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아직 최종 합의에도 이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음에도 야당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몽니로 국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게 과연 얼마나 명분이 없고 정치를 후퇴시키는지, 또 국회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당초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항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이번에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추가했습니다. 보통 국회법은 의사진행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

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됐지 이런 상임위 명칭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나 상임위 의사진행, 권한 조정 관련해 가지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격돌한 적은 있지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또 전면 무제한 허용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지,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지 지연하고 방해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물리적인 대치를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또 하나가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헌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입 배경이 나오는데요.

‘무제한토론 제도는 2012년 5월 25일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의2에서 신설된 제도이고 기존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수적인 우세를 기반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하였고 국회 소수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해졌고 마침내 국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존의 의사 강행 수단이었던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대신 회의장 및 의장석 점거라는 관행적 의사 저지 수단을 제도적으로 불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무제한토론 제도는 국회 소수파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정파 간의 타협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여기 헌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처럼 당초의 취지, 그러니까 2012년이면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 3년 그리고 최근까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고 또 발목잡기 식의 필리버스터는 당초의 제도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여와 야가 어떻게 보면 허니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난 극복 그리고 국민 통합, 민생 회복을 위해서 24시간 거의 주말도 없이 국내외를 오가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어떻게 보면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파적이고 너무나 분열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공감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용하고 또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필리버스터는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 과정을 보면 18대 국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그리고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등에서 논의가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30일에 황우여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의 필리버스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30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원활하게 처리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로써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품위 있게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특히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당이, 여당이 받느냐, 야당이 받느냐 결판이 나는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여야도 이제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교섭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술, 그러한 정치력이 돋보이게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황우여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새겨들으면 과연 이 필리버스터가 당초의 취지대로 대화와 타협의 본령인 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의 필리버스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필리버스터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과연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중한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생법안 발목 잡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시간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제한 발언이 지금 가능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가 그럼으로써 끝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얘기했듯이 국가재난 상황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이 상황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이것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발언을 하고 이렇게 밤샘을 하고 무익한 토론을 통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의원 1인당 그리고 교섭단체별로 합리적인 상한, 제한 시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건과 직접 관련된 토론만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발동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섭단체 의원 3분의 1만 동의하면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아주 국민들께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예산, 재난 대책,—오늘 같은 상황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고 봅니다.

넷째, 물론 소수 의견 보장하는 장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출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정책 결정을 하는 필리버스터는 환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토론 문화일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클러처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안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프랑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표결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회 역시 이제는 무용한, 무익한 발목잡기 식 필리버스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소모적인 정쟁, 정쟁을 위한 정쟁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지켜야 할 가치는 반드시 지키고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수결 속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국가의 발목,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토론과 건강한 의회 문화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의 필버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특히 국회법, 국회 의사진행과 무관하고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버를 한다는 거는 더욱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국회는 무려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는 검찰 권력이 정치를 장악한 검찰공화국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귀결일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또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불통과 독선, 권력을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 전반을 검찰의 손아귀에 맡긴 검찰공화국의 행태, 이러한 반민주주의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결국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불러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농단과 검찰 독재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고, 특히 검찰청이 폐지될 정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이 이제 와서 적반하장 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변화를 가로막고 국회법 개정이라는 당연한 후속조치조차도 필리버스터라는 발목잡기 장치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조금 전 얘기했듯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재난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가 핵심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국민 생활과 행정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재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채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버 같은, 지금 며칠째,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당히 피로감과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2년, 13년, 필리버스터 생긴 이후로 이번 9월 27일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고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몇 가지 좀, 국민의힘의 최근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9월 23일 자 사설을 썼습니다, '장외 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필버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과 일맥 통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21일 동대구역 집회에서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틸을 주장하는 깃발도 등장했다. 국힘은 오는 주말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장외 투쟁은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자신들의 뜻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단이다.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다. 국민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다.

장외 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 현재 정기국회가 막 시작돼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내에서 야당의 발언권이 가장 커지는 시기에 장외로 나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국회 밖에서는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내분으로 2024년 총선에 참패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성과 쇄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국 사태와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등의 무리수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그런데 국힘은 막상 2020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내부 성찰과 혁신 없이 정부 여당의 실정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 없다. 국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성과 쇄신 대신 거꾸로 가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힘 내에서도 장외 투쟁은 중도층 마음을 돌리는 데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국힘은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제가 간단하게 특정 보수언론의 사설을 읽었는데요 이 정도로 언론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명분이 없고요 장외 투쟁도 명분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뜻이고요.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 잡는 것, 특히 이 필리버스터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절대 공감을 받을 수 없고 지금 당장 멈추고 국정 현안, 화재 사건이나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법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법이 들어와 있는데요,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기록보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도서관 산하에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요.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조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해서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했지만 국회기록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로 검찰 폐지에 대한 논거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국회법은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은, 그래서 국회법이 그동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 번도 논의도 된 적도 없고 언급도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저도 여기 올라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반대 측의 명분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기록물의 수집·관리·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회운영위에서는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하고 국회기록원 소관의 사항도 함께 한다는 내용을 적시를 했고요.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한다. 기재위는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정경제부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성가족위원회는 명칭이 바뀝니다.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한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은 알다시피 정부조직법의 부수적인, 절차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하면 여지없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했고요. 국회는 그에 맞춰서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필버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라는 보수정부, 보수정권하에서도 수많은 부처들이 신설이 되고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번도 필버가 진행되거나 논란이 된 적 없었고 그 당시 야당인 우리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원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번 필버뿐만 아니에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수십 차례의 거부권이 있었지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나와도 그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보고서를 제대로 채택한 경우가 드뭅니다. 김민석 총리 청문회 불발, 최교진 교육부장관 채택 불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세청장, 통일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 자체…… 물론 반대의견을 적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택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새 정부가 일하는 것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또 지금의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장외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도,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법의 새로운 내용 중의 하나가 국회기록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상당히 공들인 조직이고 국회 내 국회의 위상을 한 단계 올리는 조치인데요.

해외 같은 경우도 국회와 비슷한 의회 차원에서 기록원 같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립기록청 산하에 입법아카이브센터가 있어서 상·하원의 자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의회 아카이브가 있고 의회 소관기관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법사위에서 국회기록원 관련 내용의 국회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원식 의장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아마 국회기록원의 의미와 그리고 그 취지,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남기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록의 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책임은 왜곡되고 진실은 은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국민에게 부당한 권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고 제도적 개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록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기록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국회도서관의 기록보존소만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이 유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증된 기록조차 정리되지 못한 채 보관되는 현실은 뼈아픈 일입니다. 기록은 곧 책임이며 국회 앞에 투명하게 서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을 이어 올 수 있었던 힘은 기록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철저히 기록을 남겼던 역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까닭입니다.

이제 국회에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록 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치하여 일부만이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의정활동을 온전히 빠짐없이 남겨야 합니다.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그 고민, 그 노력까지 국가적 유산으로 보존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기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기록원이 설치되는 때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기록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회기록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이런 내용으로 우원식 의장님께서 관련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발표하셨는데요.

하여튼 국회기록원이 생겼다는 건 과거…… 지금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또 예산정책처 등의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 기록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회기록원이 생겼다는 건 상당히 국회의 위상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뚜렷한 발전의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정부조직법상의 변화를 담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필버에서 국회법을 반대하면서 하는 내용 중의 상당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이고 또 정부조직법 통과가 되고 국회법 통과되는 게 왜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왜 타당하고 또 공소청, 중수청으로 체제가 되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의 독점에서 법치의 균형으로 나아간 거라고 봅니다.

지난 국회에서 9월 26일—엊그제지요—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 완전히 분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유예를 거쳐 내년 9월입니다.

형사사법의 두 축인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까지 검찰공화국에서 적나라하게, 참혹하게 경험한 정치검찰의 폐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특정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과 통제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과 공정한 재판을 더 두텁게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생김으로써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국민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청, 기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기소, 공소 유지, 형사 전체 총괄을 합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고 부패, 경제, 공직자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물론 세부 범위는 하위법령 또 관련법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시행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1년 유예를 해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후속 법제를 정비합니다. 그 안에는 조직과 인사, 권한, 감사, 감독 장치 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9월에 시행이 되고요.

국회법 차원의 후속 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와 인사청문, 국정감사 대상 조정 등 국회법 개정을 병행합니다. 바로 지금 이 국회법입니다. 공소청은 법사위, 중수청은 행안위 소관으로 정비될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또한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일관되게 만들었습니다. 일관성을 띤 겁니다. 뭐냐 하면 2020년, 22년부터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축소 등 지속되었던 검찰개혁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수사가 여섯 가지에서 두 가지로 축소되는 기조도 확인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불가피한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한의 집중에서 초래된 구조적 위험을 타파했습니다. 같은 조직,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쥔 구조는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민생 파탄 그리고 반헌법 그리고 불법, 공정과 상식의 모든 게 사라진 말 그대로 무법천지 그리고 정치 실종, 그 모든

근원은 검찰 독재 검찰공화국의 폐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선택하고 배당, 보완수사 요구 등 모든 단계에서 자기통제의 한계가 존재했고요. 이 점은 시민사회, 학계,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그동안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둘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적 개혁의 종착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수사와 기소의 기능 분리가 이미 방향으로 자리 잡혔고 이번 분리는 그 제도적 완결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흐름, 표준에 가깝고요. 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를 구현합니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하고 CPS가 기소 판단,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소청 역할이고 공소 유지를 하고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가 지휘 감독을 하지만 검사조직 자체가 수사기관과 구분되어 기능을 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BI 등 독립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연방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물론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률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또 반대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수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행안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경찰청과 중수청을 갖게 됨으로써 또 다른 그런 수사 권력의 비대화가 될 것이라는 걸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법률상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제를 하고요. 감사·감찰, 예산결산,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아주 투명하고 단호하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물론 행안위나 법사위 등에서 주로 하겠지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또 시민 참여라는 기제를 통해 가지고 명문화해서 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도 지금 조만간 만들 것입니다.

둘째, 공소청의 기소, 이렇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법원의 영장·재판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삼중 견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일단 수사의 어떤, 과거 검찰의 어떤 폐해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셋째, 해외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 부처 산하에 수사기관이 존재하지만 권력 집중을 제도화된 어떤 통제로 서로 상쇄하는, 아까 언급했지요. 그걸 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나 반대 측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사 공백 또 수사 인력의 이탈로 범죄 대응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유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과 사무, 사건, 이에 대한 이관 로드맵을 단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기록이나 케이스 매니지먼트(case management)의 표준을 마련해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수사 범위 축소 기조에 맞춰 가지고 보완수사, 사법경찰과의 협업 체계 이런 것도 논의하고 고도화된다면 그러한 문제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헌이다, 졸속이다 하고 비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입법권에 속하는 일반적인 조직 정비입니다. 핵심 설계는 개별 법안, 설치법을 통해서 또한 형사법, 형사소송법 체계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미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통해서, 거쳐서 지금같이 의결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다 아시겠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 권력 분산·상호 견제 또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무엇보다도 정치검찰 종식이라는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경수사권 분리부터 해 가지고 기소 그리고 수사권 분리 등을 해 왔고 관철했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을 후속 입법이나 또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국민의 이런 뜻에 맞춰서 통제 장치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정비가 됨으로써 상위 차원의 통제도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이다. 하지만 다른 수사기관 권한 남용 방지와 사건 암장 대책 등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하도록 세부 설계, 후속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치검찰의 진짜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그러한, 국민들께서 낱낱이 보셨듯이 정치검찰 특히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또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이 된 것도 정치검찰을 혁파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그러한 수사기관 그리고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의 표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했듯이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몫이 될 겁니다. 내년 9월에 출범을 하는 중수청과 기소청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필요하면 협업을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 한편으로는 사법정의 또 그리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기소 분리는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수사·기소의 분리·분권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사법 신뢰를 더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국회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제 상임위 차원의 규정인데 당연한 규정과 법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찬성토론하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당연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 필리버스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국회법에는 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재부 분리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부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기재부를 분리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운영 철학을 담아내는 것, 대전환의 어떤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조율·전환을 동시에 쥔 초강력 부처였습니다.

그러나 권한 집중은 효율보다 부작용을 키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전문성·유연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개혁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기재부는 1960, 70년대 경제기획원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당시 국가 개발계획의 총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가지고 재정경제원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1998년에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재정경제원이 해체가 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25년 기재부를 분리하고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전반적인 경제개혁 그때랑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다시 또 도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서 기재부를 출범해서 그것이 한 20여 년 동안 기재부가 지속이 되었다가 이번에 해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예산과 세제, 경제정책 모든 것의 권한을 한곳으로 몰아가지고 경제 총괄 슈퍼 부처로서 비대화됐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의 편향적 운영, 경제정책의 경직성, 국회·국민에 대한 불투명성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개편이 2008년의 통합을 다시 분리,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체제 정신을 복원하는 의미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불가피했는가에 대해서,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민주주의입니다.

예산편성과 경제정책을 분리해야 국회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독점은 국회 심의권, 국민 통제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경제정책의 전문성입니다. 재정의 압박 논리로 경제정책이 경직되면 산업·일자리·혁신 정책의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셋째, 책임의 명확화입니다. 한 부처가 경제 활성화, 재정 긴축이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지니면서 더욱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기재부의 권한 집중에 대해서 문제 삼았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 그리고 취임 후 국정메시지에서 재정과 경제를 분리해서 국회가 재정을 통제하고 정부는 경제를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당도 비슷한 견지였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재정 민주주의 강화, 국가미래전략 수립 기능의 전문화, 경제 컨트롤타워의 효율성 확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재정은 더 투명하게, 경제는 더 혁신적'이라는 구호를 대통령께서 제시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예산 권력 분산은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기재부가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약화된다, 관료 조직만 늘어난다, 재정과 경제 분리가 정책 혼선을 초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재정경제부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만, 기획

예산처는 예산만 다룹니다. 재정을 다룹니다. 오히려 정책 목표와 수단이 명확해졌습니다.

기재부 해체로 권한이 분산되는 것일 뿐 인력은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분리 체제에서—그 당시 김대중 정부 때 분리가 된 거지요—정책 혼선보다도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음이 역사적으로 이미 실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반대하는 측의 그 주장은 온당치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 경제의 분리형 모델이 있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다수 선진국에서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은 의회 권한입니다. 경제정책은 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재무부(HM Treasury)가 있지만, 재무부가 갖고 있지만 예산권은 하원 재무위원회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하원에 이렇게 예산과 재정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경제·재정·산업 부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경제정책은 협력 관계로 운영됩니다.

독일은 재무부와 경제기후부로 구분됩니다. 기후·산업·경제 정책은 독립되어 있고 재정은 엄격한 의회 통제를 받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 해외 사례를 보면 재정권은 분산이 되었고 또 의회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전문 부처 운영이 국제적 표준입니다.

역사적인 교훈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예산과 이런 모든 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 어떤 폐해가 있는지.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호조가 재정권을 독점했지만 왕실 사치와 권문세족의 전횡으로 백성은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도 원로원이 재정권을 쥐었지만 황제 시대, 황제 재정으로 통합되면서 전제정이 강화됐고 로마시민의 경제 기본권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과거 시대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과연, 재정과 예산 이런 게 한곳에 집중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역사에서 봤듯이 재정을 집중한다는 것은, 예산과 재정 이런 것을 집중하고 통제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가 해체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간다는 것은 재정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정책의 전문성 그리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정책 다각화, 균형발전 그리고 책임성 강화 그리고 재정 실패와 경제 실패의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의 기대효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재부가 분리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 가

지 논의도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요.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산업경쟁력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파고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에 신설됐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그리고 AI 대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국가 운영체제의 구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처 칸막이가 지금은 기후위기나 AI 그런 정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는 타파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안보, 산업 전략, 국민 안전, 탄소중립, 어떻게 보면 한 몸에서 처리되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평가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처가 개편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부처 개편하는 것은 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을 한 축으로 세워서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산업 전략을 통합하는 구조,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에너지 컨트롤타워를 다시 재정렬하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은 이제 대립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것을 정부조직도에 확실하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며 RE100, 기업 경쟁력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강조해 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함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통합 추진을 지금 현 정부에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 국민주권정부의 메시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전환은 가속을 하고 안보는 강화하고 성장은 동반하자는 겁니다. 전환은 빠르게 하고 안보는 더욱 튼실하게 하고 성장은 동반, 함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성장 전략으로서 기후에너지 전환을 제안해 왔습니다. 당 지도부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정부 상층부에서 총괄하고 부처 간 예산·규제·성과를 하나의 KPI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선거정책 문서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구상을 꾸준히 천명해 왔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비중 축소, 원전 편중 정책에 대해 우리 당은 국제 기조에 역행하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에너지를 환경부로 넘겨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계 표준에 부합합니다.

영국은 2023년 에너지안보·넷제로부라고 DESNZ를 신설해서 에너지안보와 넷제로를 한 손에서, 한 부처에서 추진합니다. 에너지안보 확보, 요금 안정, 재생원전 병행, 녹색산

업 성장이 부처 임무였습니다. 즉 환경이 에너지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을 통합해서 안보·성장·감축을 동시에 낸다는 것이 글로벌 표준인 것입니다.

독일식 경제·기후 결합 모델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경제기후부(BMWK)가 산업에너지·기후를 통합해 탄소 감축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끌고 갑니다. 독일 정부 공식 문건은 2030 감축 목표와 석탄발전 단계적 퇴출, 산업 데이터 순환경제 연계 등을 명확히 적시합니다. 즉 성장 전략과 기후 전략의 동시 구현이 이미 검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형 통합의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기후에너지 재원과 조정 권한을 모으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능도 정비·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쪼개진 책임을 한곳에, 한데 모아서 성과·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산업경쟁력을 위한 길입니다.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만들자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광역·기초 단위 에너지기후 통합 지역센터 표준모델을 보급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가 데이터 측면에서는 산업·전력·건물·교통·폐기물 등 전 부분에서 통합 모니터링 성과를 공개하고 민간투자를 촉발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 간에 흩어져 있던 어떤 예산·규제·성과 이런 평가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KPI 일원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형이 이제 대세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영국에 DESNZ를 신설해서 2030 청정 전력과 넷제로를 가속하고 에너지 안보를 부처의 이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EU 같은 경우도 DG CLIMA라는 이름의 부처가 ETS 국제협상, 탄소제거(CDR) 등 정책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정책 수단으로서 경쟁력과 탄소 감축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는 이런 기후 문제와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산업, 이 측면을 한 축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또 반대하는 측에서 말하는 에너지를 환경으로 옮겨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습니다. 전 세계는 통합으로, 기후·에너지 통합으로 또 산업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EU가 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왜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처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왜 신설이 필요한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단순한 부처 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저출생·돌봄 위기 그리고 성평등, 가족 다양성, 여성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분절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성평등을 권리이자 성장 전략으로 인식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당 대표께서는 대선후보 시절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을 3년 이상 공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식물 부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성평등가족부로 위상을 다시 세움으로써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돌봄이나 또 가족, 청소년 문제 그리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각 부처 간에 유관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권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께서 '성평등은 퇴행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국가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부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책 철학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여가부 시절 정책은 보건복지, 노동, 교육의 부수적인 측면으로 여가부가 취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출산, 양육, 돌봄, 경력단절, 성폭력 문제 등이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또 오히려 이것이 위기를 증폭시킨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만 바뀌는게 아니라 이제 국가전략 어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성평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성장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보편 돌봄 국가 모델을 통해서 저출생 완화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여 왔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부모 휴가, 시간제 근무, 보육 인프라로 경력단절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안정화했습니다. 영국, 캐나다는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며 국민 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국제적 스탠더드를 한국에 맞게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으로 이제 진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하는 것은 곧 대선 불복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하게 최근에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전국여성위원회도 윤 대통령의 장관 사표 수리와 후임 미임명은 여가부 폐지를 향한 의도적 행보라면서 차별 해소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성평등은 결코 후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생김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국가 측면에서 이게 강화될 것입니다. 0~5세, 0세에서 5세까지 보육, 초등 전일 돌봄, 노인·장애 돌봄 지원을 통합 관리합니다.

그리고 안전망 강화될 것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이고요.

노동시장이 혁신됩니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부모 휴가의 확대, 경력단절 예방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다양성 존중, 한부모·다문화·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강화됩니다. 성인지 예산과 지표를 통해서 정책 효과를 실시간 점검할 것입니다.

성평등은 곧 민생이자 민생은 곧 국가의 미래입니다. 국민 모두의 삶의 표준을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성평등가족부가 신설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상의 내용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회기록원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기록원은 기록 없는 정치, 망각되는 민주주의를 막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란 국민의 뜻을 모아서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기록이 없다면 후대는, 미래에 있는 미래세대는 무엇을 근거로 과거를 평가하고 기억을 하고 교훈을 얻겠습니까. 기록 없는 정치는 그것은 망각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기록원을 이번에 만듦으로써 단순한 문서 창구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집단 기억, 미래세대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기록의 중요성을 제대로 보여 준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초 그리고 춘추관, 실록청입니다.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조선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기록문화를 꽃피운 나라였습니다. 사관이 왕 앞에서도 붓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실록은 500년 역사 동안 권력을 견제하고 후대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변해도 실록 편찬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곧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담보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입니다. 국가의 위기대응과 최고 정책 결정 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특히 승정원일기는 일기 형식으로 28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 기록물로 남았습니다. 그 속에서는 왕의 일상에서부터 정치, 외교, 군사, 민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기록은 권력을 견제하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는 민주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회법에 국회기록원을 세우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국회기록원 같은 기능을 가진 부처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또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일수록 이러한 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34년부터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라는 것을 통해서 의회의 회의록, 위원회 활동, 각종 법안 심의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이 기록은 연구자, 언론,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투명성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국회도서관과 기록보관소가 있습니다. 영국은 14세기부터 국회 활동을 핸사드(Hansard)라는 회의록에 담아 매일 기록하고 공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발언은 원문 그대로 보관·출판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의 신뢰는 바로 이 기록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독일은 연방의회에 기록실이 있습니다. 나치의 폭정을 경험한 이후에 기록을 통해서 다시는 독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모든 입법 과정, 회의록,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여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기록은 곧 민주주의의 방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기록원은 우리 대한민국 민

주주의의 집단 기억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회의 모든 회의록, 청문회 발언, 법안 심의 과정, 의사일정 등이 기록되고 축적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평가하는 근거이자 민주주의의 집단 기억입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기록은 거짓을 막고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후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국회가 더욱 무겁게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장치일 것입니다.

세 번째, 학문적·역사적 가치입니다. 후대의 연구자와 국민은 국회 기록을 통해 당대의 시대 정신을 읽어 낼 것입니다. 마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가 오늘날 역사의 교과서가 된 것처럼 국회기록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기록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국민이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국회기록원이 개방과 소통의 플랫폼이 된다면 국민은 국회를 더 가까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기록원 그 기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것은 권력을 견제하는 민주주의 통제 그리고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관이 붓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미국 의회가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공개한 이유는 그리고 독일이 기록을 통해 다시는 독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록이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 그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국회기록원이 이번에 조만간 탄생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 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법에 규정된 정부조직법의 절차적인 내용, 거기에 담긴 주요 부처들의 신설 그리고 통합·폐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법은 단순한 국회 내부 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은 내부 규칙을 손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것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1조에 민주주의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는 통로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운영 원칙을 담은 국회법은 어떻게 보면 헌법 1조를 구체화하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입법권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그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 국회법입니다. 따라서 국회법의 개정은 곧 입법권 행사의 방식과 범위를 다시 규정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은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규정합니다.

첫째, 책임성입니다.

둘째, 대표성입니다.

셋째, 투명성입니다.

책임성 측면에서 국회기록원 설치를 통해서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행위를 기록

에 남기고 역사 앞에 책임지게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책임정치 구현입니다.

대표성 측면에서 상임위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후위기, 성평등 그리고 경제정책 등 새로운 민심의 요구를 국회 구조 속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투명성 측면에서 기록을 공개하고 상임위 소관을 명확히 해서 국민이 국회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의 65조 탄핵 조항이나 66조 대통령 책무 조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국회가 헌법적 가치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국회, 새로운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국회,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국회, 그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까 국회기록원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아까 빠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도서관 산하에 국회기록보존소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급으로 보조기관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기록원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현대사에서 기록의 소중함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의 국회회의록과 언론 기사, 정부 문서들이 남아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기록이 없었다면 쿠데타 세력의 거짓 주장만 남았을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군의 활동, 계엄군의 진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기록을 왜곡하거나 삭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록과 증언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었기에 진상규명이 가능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기록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자료, 청문회 속기록, 정부 보고서가 남아 있었기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기록이 부실하거나 사라져서 오늘날까지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4대강 사업입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연구 기록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서 정책평가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MF 위기 때도 정책 결정 과정의 기록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례에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얻습니다. 기록은 곧 민주주의의 안전벨트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기록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을 수 있지만 기록이 없으면 똑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기록원을 신설해서 국회기록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거고 국회의장 산하 독립기관으로 두고 그리고 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기록원은 단순한 기관 신설이 아니라 대한

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경우가 2013년,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로 거의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회법은 절차적인 측면이 많고요. 어떤 의사진행이나 중요한 결정이 아닌 한 여야 간의 합의, 또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는 정치적인 결정, 순탄한 정치가 있었는데 국회법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개편이 되면, 정부조직이 바뀌고 통합이 되고 폐지가 되고 보완이 되면 상임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촌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법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명칭 및 소관 사항 변경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조직이 바뀌면 국회 상임위도 그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가 해야 할 일은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상임위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견제나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된다 하면 국회도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재경부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정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다 하면 국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둬야 되는 거지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개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바꾼 일인데 이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한다면 과연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과연 국민들 뜻에 맞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헌법을 구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만의 내부 규칙도 아니고요 또 국회법 개정이 일반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일부 반문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리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자 뼈대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열리고 운영되며 국민의 뜻을 담는지 이 법 속에 녹아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은 곧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국민주권을 지켜 내는 일입니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일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졸속이다, 밀어붙이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충분한 논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개정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고요, 7월 24일에. 국회의장이 직접 제안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근본 규칙이므로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제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됐고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있었고요. 단순한 안건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거쳐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개선소위 당연히 거쳤고요. 법사위를 거쳐서 이렇게 했고요. 졸속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다수당이 밀어붙인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시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절차를 봤듯이 전혀 그게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헌법기관이 정식으로 제안을 했고 상임위에서 토론과 검토를 적법하게 거쳤고요. 소위원회 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했다는 겁니다. 졸속이 아니고 단계마다 투명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밟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의 후속 조치로서의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전례가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이번에 진행되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극대화하고 또 국익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이라 할 수 있는 국가통제원 화재로 인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또 여러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 본회의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과연 정당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연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여야 간에 또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부분이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좀 그런 부분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이고 무익하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필리버스터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제도로서 악용이 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논의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채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강선영)

(02시44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반대토론하기 전에 지난 화재로 인해서 국가정보원의 647개의 기능이 마비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 어쨌든 조속히 이게 해결돼서 국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은행 업무라든지 아니면 추석을 앞두고 배송해야 되는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정부민원24시 등이 기능이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빨리 복원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복구되기를 일단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필리버스터를 하신 채현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동의합니다. 여야 간에 과연 정치라는 것이 그동안 있었는지,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1년과 1년 3개월, 4개월여를 보내면서 대화다운 대화 또 국가가 어려울 때, 정부가 어려울 때 같이 머리 맞대고 서로 대화했던 것이 몇 번 정도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대리로 해서 표현하는 그런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물론 지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지만 22대 총선의 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표를 받은 것은 53.3%, 약 1475만 8000여 표고요. 국민의힘은 46.6%, 1316만 9000여 표였습니다. 이 표 차는 6.7%였는데 비례를 빼고 지역구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64%인 164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 그리고 여당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결국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국가정보원이 화재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국무위원이 30여 명 탄핵됐습니다. 어제 통과된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그 임기가 마쳐진 이진숙 위원장은 보직된 지 단 이틀 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작동하도록 국무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힘이 협치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숙의 절차도 없이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하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소수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재분배하고 국가운영의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은 그 어떤 입법보다 신중하고 투명하며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법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법의 통과 과정을 보면 토론과 숙의는 말뿐이고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일 뿐입니다.

46.6%, 더불어민주당보다 단 6.7%밖에 득표 차이가 없는 1316만 9000여 명을 대표하

는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무시해도 좋고 소음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수당이 결정했으니 무조건 따라라 하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추석 전에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것 약속했으니 무조건 하겠다. 이러한 초조함과 조급증만이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었을 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토론을 요구했지만 이것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을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쪼개는 엄청난 법안을 처리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저희 당이 제안했던 기재위, 환노위, 법사위 등의 관련 상임위의 연석회의마저 매몰차게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를 통째로 흔들면서 정작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름만 살짝 바꾸고 마는 간판갈이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이라는 그러한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가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지 초선인 제가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한두 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야당의 발목잡기,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정말 이기심으로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민주주의를 잃어버릴 것인가 하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두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지 않으면 그것이 공산주의, 기존의 사회주의보다 더 위험하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핵심 내용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유사하지 않은가, 섬뜩할 정도의 독재적인 방식으로 닮아 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 즉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것은 과거, 그야말로 탱크를 앞세우고 총칼을 앞세운 그러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외견상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정치인에 의해서 그리고 소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질식사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재자는 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자신들의 무기로 활용합니다. 22대 국회가 그동안 합의 없이 통과된 많은 법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고 사실 많은 부분이 민주주의의 파괴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의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들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질식해 죽어 가는 과정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수가 소수를 민주주의라는 원칙하에서 질식시키지 않고 올바른 민

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책은 두 가지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상호관용이란 나의 정치적 경쟁자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와 통치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그들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역자가 아니라 애국적인 경쟁자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를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친일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검찰독재의 부역자,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이라고 규정하고 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당대표의 말도 안 되는 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관용의 붕괴이며 민주주의 파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제도적 자제 이것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의회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책은 22대 대한민국의 국회를 미리 예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이 현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적 자제란 힘을 앞세워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87헌법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의회해산권을 없앴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탄핵이라는 것과 다수당의 폭압으로 질식시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72석, 범여권 거의 190석에 달하는 의석을 무기로 삼아서 통상 국회의장을 하지 않는 당이 갖도록 되어 있는 법사위원장도 독식하고 모든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협의와 숙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야말로 이와 같은 제도적 자제를 완전히 내팽개친 의회독재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독재자의 가능성을 판별하는 네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둘째, 경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셋째, 폭력에 대한 용인. 넷째, 언론과 반대자의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지가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현 이재명 정부의 행태가 이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학생들이 4·19 혁명을 일으켰고 경제개발이라는 도구를 국민의 억압 수단으로 했던 사실은 박정희 당시의 일부 유신독재, 전두환 대통령의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민주화운동……

저도 85학번이기 때문에 87년도 6월 10일 그리고 87년도 봄부터 이루어진 4·13 호헌철폐, 그런 시위와 그런 학생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3학년 때 우리 과 과대표

였기 때문에 학생회장으로 신세계로, 명동으로 한 학기 내내 학생들을 설득하고 독려해서 같이 당시의 잘못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기 많은 국회의원분들도 당시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살진 않았지만 최소한 1987년도 같이 명동과 신세계로 나가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지금의 여러분이 아닌 과거의 여러분들은 최소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흘러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당시 386, 지금 586이라고 하는 기성 정치인들이 지금 잡고 있는 권력을, 선거로 잡은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1987년도 목숨을 건 이한열 열사와 고문에 사망한 박종철, 그 우리 선배들이 과연 우리가 오늘 목도하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버렸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수당이 소수를 무시하고 정부입법이나 정부의 조직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 아마 슬퍼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고 역사를 거스르는 폭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조직법의 개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발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로 판명돼서 폐기되었던 정책들의 짜깁기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주었음에도 이러한 교훈을 애써 외면하고 실패했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역대 정부조직 개편의 현안과 최근 개편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가 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파적 시각이 배제된 국회의 공식적인 연구 분석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상세히 읽다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발상인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조직 개편은 문민정부가 당면한 대외적·대내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설 당시 세계적 추세였던 작은 정부를 특징으로 하는 행정 개혁의 물결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김영삼 정부의 1차적인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원칙을 제시하고 신공공관리 관점에 입각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1960년대의 정부 주도형 개발전략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명분에서 이루어졌고 확대 지향적인 과거 정부조직과 달리 축소 조정의 기조하에서 이루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총 4회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제1차 조직 개편은 취임 전에 실시되었으며 총 1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처 통합을 통해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문화체육부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상공자원부로 각각 개편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기

구가 기존 2원 16부 6처 15청에서 2부가 감소해서 2원 14부 6처 15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한편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2차 개편, 94년 12월 23일에 실시한 것입니다. 1차 조직 개편에 비해 개편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 그 시점도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정책과 예산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신설하였으며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를 신설하였고 제1차 개편에서 신설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산업인 정보통신사업 추진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습니다. 제2차 조직 개편을 통해 2부가 축소되었고 1부가 승격되어 정부 기구는 2원 13부 5처 15청으로 변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경제, 정치, 행정, 국제적인 배경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 외환위기 극복이 강력한 화두로 요구된 시점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동 정권을 여당으로 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력 분점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습니다.

행정적으로는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대응과 행정에 대한 전반적 쇄신이, 국제적으로는 세계화 진전에 따른 적극적 통상정책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가 시장주의 개혁을 압박하면서 행정기구 개편의 방향이 시장주의에 바탕을 둔 정부 규모와 기능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 및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정부 혁신 비전으로 설정하고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를 목표로 추구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급박한 사회 변화 속에서 총 3회의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대통령 취임 준비기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1차 개편을 단행하였고요. 총 41개 기구 중 13개가 신설될 정도로 변화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최종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간 협상 과정 끝에 상당 부분이 수정되어 1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는 대통령 취임 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독자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당초 정개위는 정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기획 및 개혁 기능과 연계하는 안으로서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를 두고 예산기획의 기획국과 예산편성의 예산실, 정부 개혁을 위한 정부개혁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공동정부하에서 대통령의 권한 비대가 우려되어 결국 예산편성권이 예산청으로 독립하여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하는 정부조직법에는 예산 기능이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 비대가 우려돼서 예산편성권을 독립시켰던 그 정신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경제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

제부,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청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조직 개편 결과 2원 14부 5처 14청에서 17부 2처 16청의 조직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제2차 및 제3차 조직 개편에서는 제1차 개편의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이 이어져 기획예산위원회를 처로 바꾸고 부총리제를 부활시킨 조치가 그 전형적인 예로 거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조직 개편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다시 통합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였고 금융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폐지된 공보처를 국정홍보처로 부활시켰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처도 부활시켰습니다.

이어서 3차 조직 개편에서는 부총리제도를 복원시키고 경제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총리까지 2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에 따른 부정부패, 산업구조의 변화와 민주화 요구의 성장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하는 정부, 분권화된 정부, 투명한 정부를 정부 혁신 목표로 설정해서 급속한 경제 발전 이면에서 심화된 양극화와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하기 위해 봉사하는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를 정부 혁신 목표로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공공관리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고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 6회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는데 노무현 정부의 1차 조직 개편은 임기 중 실시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총 42일이 소요되었는데 1차 개편을 통해 18부 4처 17청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모든 정부 출범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다른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점증적인 방식의 정부조직 개편을 취했는데 중앙정부조직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의 편제를 큰 변화 없이 유지했고 개편이 필요할 시 행정기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최소화된 조직 개편을 실시한 점이 특징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 및 업무 과정 개선을 통해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은 행정적 측면에서 과거 정부조직 편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 혁신은 작은 정부와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으로 집약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줄여 시장과 지방정부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적정 규모의 정부를 지향한 전임 정권과 달리 작은 정부 및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면서 정부 구성 및 운영에서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 중심의 정부 혁신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능하고 작은 정부, 국민을 섬기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 설계와 대부처주의를 기조로 부처 통폐합을 통해 총 3회의 조직 개편이 추진되었는데 제1차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32

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정부 출범 직전에 완료되었고 해당 조직 개편 결과 다수의 거대 부처가 탄생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해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재정 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금융정책 및 외국환 거래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 기능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얻은 교훈은 경제정책과 예산의 통합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는 오만이며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이념 실험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행정 비효율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라는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을 안고 있는 것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강력한 군사력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국가시스템이야말로 국가안보의 중요한 초석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이 발전되면서 적들은 총과 포 등 재래식 전력만으로 우리를 위협해 오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분열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혼란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돼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이 법안은 그리고 그를 통한 조직 개편은 바로 북한이 우리의 가장 약한 급소를 보도록 스스로 내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마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의로운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방첩 시스템, 즉 스파이를 잡고 국가기밀 유출을 막는 정보수사기관의 대동맥을 끊어 버리는 자해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비단 민생 범죄나 부패 범죄뿐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즉 간첩 사건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공안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대공 수사의 노하우와 전문 인력 그리고 해외 정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험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했던 기능을 아무런 대안 없이 검찰을 해체시킴으로써 공중분해시키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신설된다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고도로 전문화된 간첩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도 인력도 시스템도 없는 신생 조직이 북한의 정교한 공작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는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첨단 방산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 문제입니다.

기술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

리와 국가경쟁력, 나아가 안보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 범죄 수사 역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검찰이 주도해 왔습니다. 이 기능이 마비된다면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기술 강국의 지위는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K-방산의 신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중동 등 세계 각국에 우리의 명품 무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몇 개를 파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기술력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K-방산의 성공이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되겠습니까?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출 금융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러한 팀워크를 산산조각 내 버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져 방산 수출에 필수적인 신속한 금융 지원 결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서 산업 정책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고 특허청마저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처로 분리되어 방산 핵심 기술 보호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부처마다 칸막이를 높이 쌓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관료주의의 폐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K-방산의 성장 동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우리의 국방력 강화와 우방국가의 안보 협력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매우 냉혹합니다. 동맹국들은 우리의 내부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보고 우리와의 파트너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혼란과 약점을 파고듭니다. 아무런 명분도 신뢰도 없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대규모 조직개편은 우리의 동맹들에게 대한민국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나라라는 최악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장 한미동맹의 굳건함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보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보기관의 기능이 마비된 나라를 과연 동맹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북한에게는 지금이 바로 도발할 수 있는 적기라는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가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된 틈을 노려서 북한은 언제든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장병들은 튼튼한 국가시스템 위에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치권이 이념 다툼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안보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전선에 나선 우리 아들딸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방위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안보 자해 행위고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또한 왜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에는 많은 부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치주의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법으로 다스린다는 법에 의한 지배, 룰 오브 로(Rule of Law)

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 아래 평등하며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의 지배, 즉 룰 오브 로(Rule of Law)를 의미합니다.

법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는 행태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 룰 바이 로(Rule by Law)입니다. 의회 다수 의석이라는 합법적 권한을 이용하여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법의 형식만을 빌려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법 기술자들의 행태일 뿐입니다.

검찰청 해체 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이 그 지위를 인정하는 기관을 하위 법률로 해체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경제부처를 졸속으로 개편해서 예측가능성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한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의 세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어느 한곳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대한 발명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법부의 위험한 독재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입법부가 행정부의 조직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나아가 헌법이 인정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존립마저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다른 두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행정부의 기형적인 비대화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대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어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키고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두어 총리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부 내의 견제와 균형마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법부의 무력화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에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이 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권력자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독재와 법치가 아닌 인치만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험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9월 27일은 이러한 검찰청이 해체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날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를 두었지만 앞서 법사위에서 주호영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1년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디에 설치될지, 그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폐기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수출 부분을 제외한 에너지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이것이 어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은…… 검찰이 정치검찰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정치검찰화되었다면 검찰이 정치검찰화되지 않도록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지, 정치검찰화되었다고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이렇게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 의도의 불순함이 많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우리 당에서 실시한 토론회에서 지적한 국가수사위원회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4대 검찰개혁 법안, 즉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그중 검찰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통제하고 수사정책 및 운영 지원, 수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조정,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적법·적정성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 이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를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에 불과한데 감사원이 헌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직무감찰 등을 위해 각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헌법에 근거도 없이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현장조사, 청문회 등 행정조사권을 규정한 뒤 이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법의 기본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사 실무 차원에서도 지방조직도 없는 국가수사위원회가 현재 검찰이 처리하고 있는 연간 수만 건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의 불송치 이의사건 처리를 전담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폐지되면 당장 구속사건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구속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복잡한 금융·경제 범죄 사건 등 공소장 작성에만 수일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구속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은 검찰제도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초등학생 수준의 이해도 없고 오직 검찰을 파괴하고 말겠다는 탈레반식 극단주의자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검찰과 형사사법제도를 회복 불능의 불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국가수사위원회가 중국의 검찰제도와 어떻게 유사한 길로 가게 될지 중국의 검찰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978년 3월에 통과된 중국의 수정헌법에는 1954년 건국헌법의 수직영도체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급 검찰원의 감독과 동급 인민대표회의의 지위 내지 영도를 결합하는 이중영도체제를 채택합니다. 중국 헌법 제138조는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를 있게 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3조, 제9조, 제11조 등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복수정당제에 의한 서구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달리 중국은 공산당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인정함에 따라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이 인민검찰원을 영도하게 됩니다. 외형상으로는 공산당과 국가기관은 이원적 통치체제를 구성하고 있고 공산당은 정치적·이념적인 지도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모든 국가업무는 공식적 국가기관이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에 의한 독재로 인해서 공산당과 인민대표회의는 사실상 동일체로서 기능하고 있고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공산당이 내리고 국가기관은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급 당위가 인사·재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인민검찰원을 사실상 감독하게 됩니다.

중국 헌법은 제136조에서 인민검찰원은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중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4조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어 검찰권이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검찰권 독립은 인민검찰원의 독립을 의미할 뿐 검찰관의 독립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검찰기구의 독립과 관련해서 검찰 1체제 원칙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원칙은 검찰권 행사의 전체적인 통일을 위하여 검찰관을 통일된 조직체로 만들어 검찰관의 모든 활동을 일체화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사동일체 원칙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나 검찰권 내지 검사의 독립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중국의 검찰제도는 공산당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인민검찰원은 이를 집행하는 체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검찰 1체제 원칙에 의해 국가적으로 전국의 검사가 일체화된 검찰권 행사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7년간 유지돼 온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는 프랑스·독일·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근간으로 한 제도입니다. 법무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경찰을 지휘하며 수사와 공소를 유지하고 형 집행을 총괄하는 체제입니다. 검사 인사제도 등 일부 취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집권 정치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찰

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함부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건 송치 방식으로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원칙하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집권 정치권력이 경찰, 즉 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수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행정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검찰제도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오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의거 검찰이 폐지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각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의 조정, 수사지휘, 수사에 대한 감사, 감찰,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조사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번 검찰개혁법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국식 공안통치와 유사한 체제인 이유는 수사권의 본질이 준사법권이고 우리 헌법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도록 집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인민검찰원과 공안에 대해 지휘·통제하는 구조이고 우리도 검찰을 폐지하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지휘·감독·감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조직과 구성, 권한에 관해 현행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당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의 헌법적 가치는 첫째,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체 구속의 남용을 억제하여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둘째, 영장 발부에 있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판사와의 기능적 권력 분립을 통해 인권 보장을 더욱 충실히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헌법의 영장청구권 규정에 의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검사의 지휘와 권한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가 법원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 법원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2020헌마264등 사건에서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검사는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헌법 개정 없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를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형해화된 형태의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것은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감사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헌법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에 대한 효과적 직무감찰, 감사를 위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한 자의 출석, 답변요구, 문서·장부 등 제출의 요구,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대해 감사원과 유사한 행정조사 권한 및 직무감사 및 감찰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에 아무런 설치 근거 규정이 없는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을 지휘·감독·감사·감찰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면 헌법상 근거가 필요할 것이고 헌법상 근거가 없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없이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담당하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는 검찰 폐지 후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중수청 불송치 사건의 경우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일반인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아니할 종국적인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일차적 수사종결권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이의신청 사건 재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의 자의적인 불송치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 가능할 수 있으나 검찰이 폐지된 현재 통과된 법에 의해서는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이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준사법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하여 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적절한 불복제도가 구비되어야만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행위, 즉 권리구제 절차의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제도 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2011년 6월 30일 판시하였는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에서 권한을 남용해 불송치 처분을 하였을 경우 현행 검찰의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와 같은 실질적인 불복 절차가 완비되어야 하고 그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의 수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건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행정조사권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둘째, 행정위원회에 불과한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민간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행사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법상 관련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헌법상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행정조사권의 행사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조사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행정기관은 행정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법 원리의 기본에 관한 사항이고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사위원회의 국가수사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더라도 이는 행정조사가 아닌 같은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근거 없이 국가수사위원회에 수사기관에 대한 강제적 성격의 행정조사권을 부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행정법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영장심사 관련한 권한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은 당장 구속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폐지되면 검찰 구속 제도도 없어지고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만 남습니다. 경

찰 구속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조선 식민지 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였는데 제13조에 사법경찰이 14일간 구류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22년 개정으로 사법경찰의 구류 기간이 10일로 줄었고 이것이 현재의 10일간 인정되는 경찰 구속 제도의 기원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찰 구속 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 체포 제도만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 잔재인 경찰 구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구속 제도는 국제인권규약과도 맞지 않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5조 3항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사람은 즉시 법원 판사의 사법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구속을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사법기관의 처분하에 검사 등 사법관이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 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 10일간 구금할 수 있는 외국 입법례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되면 최대 10일간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 구속 기간도 없어져야 하고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속사건에 한해 검찰이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소권 분리론과 모순되는데 만약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 구속사건을 곧바로 기소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피의자가 여러 명인 주가조작 사건이나 조직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 판단, 공소장 작성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연 어떻게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의해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그대로 경유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공소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패범죄나 중대 증권·금융범죄 관련 구속사건은 거의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고 총 구속기간은 경찰 구속기간 10일이 전부인데 10일간 복잡한 금융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라 검찰을 폐지하는 것은 형사사건 처리 실무에서 엄청난 대혼란이 발생하게 됨은 물론 중대범죄자들이 허술한 수사제도를 틈타 활개 치는 범죄자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을 폐지하고 당장 구속사건 처리를 위한 검찰 구속제도의 존폐 여부, 검사의 보완수사 또는 추가 인지수사를 허용할 건지 여부 등이 앞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처리도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저께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검찰이 담당해 오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처리를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전국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의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수만 건 이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재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많은 전국의 불송치 결정 이

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중수청 및 지역 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불송치 결정한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심급 제도를 바탕으로 한 불복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크고 경찰 및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권한남용의 위험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은 모든 수사를 집권 정치권력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통치로 가겠다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대국민 선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잘 유지돼 오던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구속 사건 처리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 및 항고사건 처리 등 실무상 대혼란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한 뒤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고 경찰은 직접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정론의 최창호 변호사는 검찰 해체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은 상당한 형사사법체제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우리 사법체계도 상당한 변화가 앞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수사 단계,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의 주재자라는 내용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인권침해 내지 견제 장치 부족 등으로 검찰은 많은 비난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일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마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는 검사라는 용어가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2회 등장하고 헌법 제89조에서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검찰이 없어졌으니 이렇게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에 의하여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정신을 어기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도상 그다음에 일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도 말로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판사에게 심리는 하되 판결은 하지 말라고 하는 심리와 판결을 분리하는 것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는 하되 처방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검사에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초동수사 기관으로 특수 분야 등에서 역할이 과대평가되는 바람에 사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한다면 검찰을 아예 없애 버릴 것이 아니라 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 기능은 유지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공수처의 등장으로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변화를 시켰어야 했는데 지난 계엄과 탄핵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공수처, 검찰이 조직에 총력을 다해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법령이 미비하다 보니 많은 혼란이 초래된 것을 우리는 다 목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수완박이라 그래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 이번의 검찰청 폐지도 1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도가 변화되는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기본권 보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면 유명한 풍자적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모순된 체제를 풍자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들 사이의 평등을 주장했던 혁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도자 계층이 특권을 누리며 점점 더 독재적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에서 이 계층은 돼지들이지요. 이러한 내용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권력자나 조직이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차근차근 수정하고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미 공수처가 이번 탄핵 사건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법은 숙의 과정 없이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폐지돼야 한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검찰들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검찰로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 개혁법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할 정도의 것이었나? 그렇다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조정하고 중립성을

지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초동수사를 하는 경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완수사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러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물려받은 경찰의 공룡처럼 되어 버린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와중에 도외시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검사들이 기소, 불기소 결정하고 통일적인 사건 처리를 했는데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후에 기소되는 사건의 송치와 불기소되는 사건의 송부로 인해서 사건이 분리되고 결정이 어긋나며 다수 당사자의 복잡한 사건이 쪼개지는 바람에 현재 기록의 소재조차 불투명한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수가 많고 죄명이 여러 개인 경우에 검사의 기소 및 불기소에 대한 판단이 나누어지게 되고 경찰의 송치 내지 불송치 결정이 나누어지게 되는 경우에 이송까지 되고 법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검찰 제도가 유지될 때는 검사가 처분을 하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이루어지는 결재를 통해서, 불기소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등을 통해서 고등검찰청 검사들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고검 내지 대검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사건처리가 복수의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공소청은 기소에 대해서만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불복, 통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20%만 기소되고 나머지 80% 정도가 불기소되는 현실에서 불기소되는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재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통제를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와 중수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적절한 통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국가수사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동안 형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불기소 사건에 대한 대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과거 검찰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해 봐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 항고와 재항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고소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 보장될 거라고 기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는 것보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거나 바람직하다는 실증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마치 그물코처럼 한쪽을 들어 올리면 다른

쪽이 따라서 올라오도록 그런 현상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개편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과 그것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수청 설치법에 보면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은 국수본과 중수청을 관할하게 되는데 행안부장관이 국수본과 중수청, 거대한 수사기관 2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사법 관련자들은 이제는 모두 경찰의 선의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 업무에 가려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국가 송무 담당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하던 역할을 어떤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송무의 기능에 대한 숙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검사 또는'이라는 네 자를 삭제한다고 해서 검사가 사라지고 모든 업무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검찰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창설된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눌 것입니까?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똑같이 기소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도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제도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가 소속된다면 이 또한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의 관할과 수사권 충돌의 문제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의적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 위로 보이는 빙하는 작아 보이더라도 물 밑에 있는 빙하는 매우 거대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크의 이권분립,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넘어오면서 검찰제도가 왜 탄생했는지, 그 공과는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교각살우의 우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구성되면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부패범죄, 대형 금융 내지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면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하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졌던 많은 수사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수청에서 수사해서 송치한 몇만 페이지가 되는 다수 당사자가 연관된 금융범죄 사건을 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록만 읽고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송치 의견서를 원용하면 된다는 입장만 갖고 있다면 결국 공소청 검사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각 경찰서별로 공소유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1985년을 전후하여 검찰제도를 창설한 영국이 이와 같은 우를 범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몸통 없는 머리에 해당하는 검찰이 손과 발에 해당하는 머리 없는 몸통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 없는 몸통의 통제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그러했듯이 권한이 비대해지면 그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비례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법치국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소 유지 문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공판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포함하여 증거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권한만 보유한다면 형사소송법은 아마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기본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러한 형사소송 법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수사위원회, 공소청, 중수청법이라는 특별법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겪게 될 혼란을, 우리가 앞으로 1년간 겪게 될 혼란은 아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 또는 검찰청에 한 번도 가 보지 않고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본인은 법률가에 의한 판단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경찰이 이를 불송치하고 이런 불복 절차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법률가의 정당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사실상 일반범죄 같은 경우 대부분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사는 이후에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나 이 사건에 의거한 구속이나 송치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가 미흡할 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이것을 공소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심증은 가는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직접수사도 할 수 없는 검사는 이 구속피의자를 석방시켜야 하는지 현재 형소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검찰이 검찰권을 공평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별건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하고 인권침해 수사하고 중복 수사하고 권한남용 등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을 해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했던 건 아닙니까?

2024년 작년에 전국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자그마치 67만 79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20%가 기소된다면 나머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검수완박의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검찰의 해체는 앞서 검찰 수사권 조정에서 겪었듯이 수사가 지체되고 보완수사가 미비해서 국민들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 증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다양한 검찰을 대체하는 기관들이 설립되고 이렇게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될 것인가, 다양한 수사기관 간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로가 떠넘기는 식의 사안이 증대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개혁은 속도전이 아니고 방향성과 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옳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고 그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점을 숙고하고 정말 올바른, 국민이 원하는 방향,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검찰이 아닌 정말 국민들의 피해를 올바르게 구제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사법시스템으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죄지은 자를 벌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검찰개혁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에 설치되고 모든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채 공소청 검사, 즉 공소유지담당관으로의 지위로 변경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됐던 그리고 통과된 검찰개혁안은 행정안전부에 중대수사청을 설치하고 총리 소속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모든 수사기관을 조정·통합하면서 각종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범죄의 수사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소송의 주체로서 피고인의 소추와 공격을 주된 임무로, 또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에 관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의무가 부여되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검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준사법기관이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사법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상으로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한 지위를 가졌지만 법원과 유사한 심판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신분 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하였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집니다. 검사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는 따라서 광의로 보면 분쟁의 법적 해결이라는 사법 기능의 일부이며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준사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신분이 보장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지위관계에 있어서 행정부의 다른 기관들과는 구별되는 장치를 두고 있고 또한 사법의 영역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법원에 대응하여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므로

자격적으로 신분 보장에 있어서 법관에 준하도록 규율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능입니다. 즉 중대범죄라고 하는 건 명칭에서 말하듯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 그렇다면 이 수사는 매우 엄중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휘나, 준사법기관의 지휘와 통할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주는 중대범죄라면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진행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되면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가면서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고 단순히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되지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각종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능하는 각종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수청은 관련 범죄 수사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중수청이 관련 범죄에 대한 직무범위 모호성과 추상성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다른 수사기관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찰개혁법은 통과됐습니다.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헌법에서 명시하듯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현행법의 개정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이러한 판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을 폐지함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명분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사법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피의자의 인권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낳는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의 법안을 추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러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것을 보상할 것인지, 향후에 우리 미래세대가 현재의 우리 법을 통과시킨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문제는 검찰청뿐 아니라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이번 방송 3법의 통과는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커다란 3개의 기둥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개의 기둥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소위 민변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끊임없이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사장과 임원을 결정하는 이사회 추천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정치적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사의 동일체, 방송산업 규제의 중첩 문제 등 자율적 기업활동의 근간을 위협하는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지만 방송사의 사장 및 임원진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장악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앞에서 충분히 검토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법안, 과거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을 다변화시키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가 도입과 의무화,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조항 신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대상 사업자 확대,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 노동조합 또는 기자회, PD협회가 사측과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법 개정의 탈을 쓴 공영방송 사장 임기 박탈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많은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가지고 크게 충돌하는가. 1년이 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는 정부와 국회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올바른 시각으로 방송돼야 되는데 방송사들의 편향된 방송 시도, 왜곡된 선전 선동이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결국 그것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폐해가 발생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과방위는 편향된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는 그걸 심사해서 본회의에 표결을 부쳐서 통과돼 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방송 3법, 방송위원회법, 이번에 어제 통과된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인해서 임기를 1년여 남겨 두고 사임하게 된 방송위원장의 문제까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올바른 판단과 정견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이 방송이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의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운영위에서 국회법, 국가기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검찰이나 이런 법에 대해 얘기하느냐? 사실 국회기록원법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나?

국가정보원에 화재가 발생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재난이 국가에 발생해서 필리버스터를 멈추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한다면,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 왜 이 시기에 국회기록원을, 그것도 차관급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쓸까?

제가 국방위에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것이 간첩법을 좀 개정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 9·28입니다, 9·28. 9·28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9·28이 6·25 때, 6·25가 터지고 굉장히 많은 중공과 북한군에 밀려 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마산-왜관-영덕을 연하는 낙동강 전선까지 국군이 미군과 같이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다가 9월 15일 날 인천상륙작전을 하지요. 그리고 9월 27일 날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리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날이 9월 27일입니다. 해병대 6중대 박정모 소위와 그 대원들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28일 중앙청 앞에서는 해병대가 행사를 합니다, 서울 수복 행사. 저는 필

리버스터를 하게 됨으로써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는데 1950년 9월 28일 날, 해병이 서울 수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 새벽부터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때 우리를 공격한 적은 북한과 중공군이었습니다. 물론 냉전 시대를 거치고 나서 지금은 국제사회가 각각의 국가 이익에 맞춰서 체제 전쟁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국익을 앞세워서 외교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아픔을 겪게 한 나라지만 지금은 안보 면에서 또 여러 가지 교류 면에서 일본과도 때로는 적대시 그러나 때로는 가깝게 원근을 나누어서 교류를 해 왔지요.

중국도 우리에게 매우 경제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 간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기록원법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장님이 의견을 내셨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간첩법을 개정하자라는 논의가 멈춰 있다는 것, 왜 그런 거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관광객을 빙자해서 대한민국의 비행장 시설을 사진을 촬영하고 걸리면 이 사람들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송파구에 있는 중국 식당이 알고 보니까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로 드러났지만 결국 이 소유주는 횡령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고 첨단기술을 유출한 대기업 임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만 송치됐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간첩법, 형법 제98조는 적국으로만 처벌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외의 국가 출신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OECD 38개국에서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형법 제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13조, 국가보안법 4조도 간첩죄 조항을 통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또한 모두 적국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현재로는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앞서 중국 그다음에 중국에 유리한 기밀을 유출했을 때 간첩죄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군사시설을 찍어 가고 적대 행위를 해도 우리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2004년도에 발의됐습니다, 적국으로 고치자고. 그런데 왜 이 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방송법 통과시키고 하는 속도대로라면 지금 간첩죄 개정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처리 안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중국하고 일본에 군사기밀을 군무원이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간첩죄가 아니고 군사기밀 누설죄로 해서 징역 4년밖에 선고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간첩죄였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는데 군사기

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2국가론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형법 98조를 적용하는 것도 적국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국가는 아니지만 간첩죄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에 준해서 취급한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북한을, 간첩을 처벌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간첩행위를 적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넓히고 북한 사람, 대한민국 헌법상 비국가단체·반국가단체·외국인단체로까지 확장해서 이들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형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기밀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걸 주고받아도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전달했는데도 국가기밀이 아니니까 간첩죄 적용이 불가합니다. 얼마 전에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첩은 우리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기술 발전과 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간첩행위뿐 아니라 디지털 간첩활동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 법률로는 현대적 간첩활동을 충분히 처벌하거나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간첩법 개정안,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디지털 간첩행위를 포함하는 것 등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및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간첩 혐의자를 감시·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중국은 형법 제11조에 간첩죄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개정돼서 반간첩법을 통해 제3국을 겨냥하는 간첩활동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이현령비현령의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연방보안국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던 한국인 선교사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은 간첩죄의 근거법인 간첩법을 통해서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보고서로 공개하는 모든 범죄를 간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화이트요원들과 10년간 접촉했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그래서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관에게 체포된 것도 이러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서 간첩행위에 대해 적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고요. 독일도 형법 제94조를 통해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 정보사의 기밀유출사건이 있고 그래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한데 아직 이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왜 이것을 반대하고 통과시켜 주지 않는지……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데 국민들 68.05%가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인권침

해라고 해서 반대하는데 인권침해 막다가 국가안보가 위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많이 고려해 주시고 이렇게 검찰개혁법, 정부조직법 막 밀어붙이시는 그 속도로 이것도 좀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 입장으로 유엔에도 참석하시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 않지요. 그 와중에 환율도 지금 1400원을 넘어서고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기재부 개혁법을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의 연혁을 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재정과 예산 관련해서 기획처와 재무부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흥부, 경제기획원으로 신설·개편 과정을 거쳐서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신설되었지요.

98년에는 대통령의 국정관리역량 강화 및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예산청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이원적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되면서 99년에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했습니다.

이후 예산과 정책 기능의 분리 구조와 관련해서 정책조정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 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재부를 신설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에 대한 개편 논의가 되어 있는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분리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금융감독과 금융감독 집행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이 부분은 지금 발의하지 않기로 했고요.

기재부의 예산 기능과 경제·조세 등의 정책 기능은 분리와 통합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특정 부처로의 권한 집중에 따른 분산의 필요성, 때로는 분리 개편 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지요.

현재 기재부는 2008년에 조직개편 할 때 국가재정 운용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 체제에서는 예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재정경제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저하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돼 온 경제부처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요. 이처럼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면 현재 국가채무, 51.6%에 달하는 재정 문제의 악화 우려가 심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로 미래 세대 주머니를 약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라는 위기와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을 확장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위축돼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여러 가

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실에 막혀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다시 새롭게 등장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재정준칙의 논의가 후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 분리는 사실상 대통령실 통제하에 유명무실한 예산권을 부여받을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 측면에서 이번 개편안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 삼각체제를 다시 흔들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합해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면서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는데요. 기재부를 분리해서 예산권을 국무총리 예하로 둔다면 정부 편성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부채의 증가는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는 것이고, 지금 좋자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펑펑 썼을 때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기록원법이 왜 잘못된 입법 시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국회기록원법을 만들어서 차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위인설관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것이 토의되는 과정에서 소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 거치지 않고 통과됐고 그렇게 돼서 상정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운영위에서도 말씀하시고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시대 500년이 흘러왔던 것이 기록의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기록의 투명성과 보존을 내세우지만 실제 이 내부를 보면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근간을 흔들고 자칫 이러한 기록관리가 혹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록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국가기록원법은 첫째,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의 범위를 현재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현행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즉 공공기록물법 제10조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그 범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록물 관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생산되는 공식적인 기록물은 당연히 공공기록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기록원법안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활동 기록까지 국회기록원의 수집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당법상 단체인 정당을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도 당연히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기록물법상의 공공기관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정당은 사적 결사에 기반을 둔 정치적 조직으로서 공공기록물법이 정하는 공공기관과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만약 이들의 기록까지 공공기록물로 분류해서 의무적으로 수집하려고 한다면 이는 모법이 되는 공공기록물법의 기본적인 정의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최수진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공공기록물법 10조에 의하면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개별 의원이나 정당까지 확대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법과 충돌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법적 하자를 정확히 꿰뚫는 지적입니다.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한 행위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위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사적인 활동과 공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적인 영역까지를 공공기록물이라고 해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정책 연구, 지역 민원 해결, 당내 논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 등 수많은 활동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활동 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원에 제출하게 한다면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활동은 정당의 고유한 정치적 이념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의무적으로 수집될 경우에는 정당의 자율성과 전략적 판단에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국회기록원 설치는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위배되고 이것은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기록물 관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 1호에 따라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관장, 헌법기관 기록보존소장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기록물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국가 전체의 기록물 관리 방향과 정책은 이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기록원법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기록원과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 및 새로운 독립기관의 설치는 국가기록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법안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이며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지연 의원님께서도 운영위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전체 국가기록물 관리의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기록원 설립과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 같은 것은 당연히 논의 사항이 되고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 그 자체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안은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한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가기록물 관리는 단순한 문서 보관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교훈을 제공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특정 기관의 일방적인 의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만약 이러한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다른 헌법기관들도 독자적인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들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의 파편화를 가져와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 법안은 입법권을 무기로 기록을 정치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기록을 정치적으로 독점하는 행위, 입맛에 따라 선별하고 누락하고 과잉 기록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 정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이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중립성을 위반하는,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기록원법이 입법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기록의 선별·누락·과잉 기록 등 정치적 입맛에 따른 기록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은 역사적 진실을 담보하고 미래세대에 교훈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거나 오용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기록이 어떻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곧 역사를 지배하는 자라는 말이 있듯이 기록에 대한 통제는 곧 권력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록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보조 정책이나 견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기록원이 설립된다면 기록이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록만을 남기고 불리한 기록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동기록이 의무적으로 수집될 경우 이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면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다양한 의견 표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이 법안은 정당 및 의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정당법에 의한 기본 정신을 흔들고 정당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기록원이 이들의 모든 활동 기록을 의무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 한다면 이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정당의 내부 논의, 전략회의, 정책수립 과정 등은 고도의 정치적 민감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장치 없이 의무적으로 수집된다면 정당과 의원들은 자신의 활동이 감시

받고 통제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치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된 정책결정 과정이나 전략적인 판단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록 등이 의무적으로 기록원에 제출되어 언제든 공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의원들이 소신 있는 발언은 꺼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정당의 정책 역량을 약화시키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과도한 개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될 때 비로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법안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및 예산, 인력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과 부서가 존재합니다. 국회도서관 산하에는 기록보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처 속기과에서는 회의록을 담당하고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은 지금 국회기록보존소에 기록되어 있는 건수가 400만 건 정도 되는데 지극히 사무적으로 생성된 것이 380건이다, 그리고 의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약 20만 건 정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방대한 양의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존 제도들이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독립기관인 국회기관을 설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이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국회기록원이 설립된다면 사무총장에 의하면 약 35명의 인원이 증원되고 3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기록보존소에 인력이 27명, 사무처 박물관에 3명, 직무조정 TF에 10명, 도서관 사서직 10명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순증하는 인원이 35명이고 이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 예산이 연 3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구나 차관급으로 신설한다는 것은 자칫 위인설관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 곽규택 의원도 정부기관에서 차관급으로 어느 기관을 신설하면서 기존에 20여 명이었던 인원을 70명까지 늘리면서 인원을 확장하는 조직과 예산을 확장하는 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국회가 아니라면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심도 있게 심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이 법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부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대규모의 조직 확장은 기존 업무와의 명확한 구분과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정을 감시하고 법을 제·개정하고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결산하고 편성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도 이러한 기관을 차관급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 기관의 필요성과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을 기존에

있는 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가의 여부를, 그렇다면 그 기능은 현재 상태에서 인력을 재분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야지 왜 검찰청은 없애면서 기록원은 만든다고 합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해외에도 이런 입법례가 없다는 것도 이 법안의 당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입법부 산하에 이렇게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어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더군다나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의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입법부 산하에 이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차관급 기관을 두고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례는 단 1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기록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않고 만든다면 이건 아마 예산을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행정부나 사법부와 다른 고유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물 역시 특별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의회를 운영했던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은 입법기관에서 어떻게 기록물을 잘 관리하고 수집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서 현재 인원과 구조로, 조직으로 최적의 기록물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이걸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새로 35명을 만들고 그 인원들을 충원한다면 어디서 근무합니까? 35명을 위해서 또 다른 건물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기록물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 그다음에 그 기록을 보존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 이런 걸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없이 이런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위인설관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무총장은 굳이 이 기관을 차관급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록원장이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관급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권위적인 시대의 계급이 높아야만 아랫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상대해 준다는 이런 권위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면 상대가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계급이 높으면 의원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 이거는 과거 어느 시절의 이야기인지 그 권위적인 발상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국회는 삼백 분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의 다양한 중요한 자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자료가 사무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원장이 수집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기록원장의 입맛에 맞춰서 누구에게는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존안을 많이 하고 누구 자료는 수집 안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의 중요성, 질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어떻게 기록원장이 평가합니까? 그다음에 어떤 사람의 기록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의 기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저는 현재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사고가 중립적이지도 않

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만약에 기록의 보존이 중요하다면 현재의 기능을 어떻게 올바르게 기록 보존에, 기록 수집에 활용할지, 기관을 먼저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부터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27명, 증원 35명, 그래서 70명의 조직을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겠답니다. 그런데 70명 정도의 조직의 수장이, 어떻게 70명의 조직의 수장이 차관이 될 수 있습니까? 조직의 사이즈에도 차관급의 수장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절차적 민주주의와 야당의 의견 무시.

지금 22대 국회의 모든…… 대부분의, 모든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한두 마디 반대하면 바로 표결하자고 합니다. 과거의 국회에서, 다선 의원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애초에 인력 구조 자체가 다수와 소수가 명확한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소수의 의견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고 다수가 마음대로 할 텐데 과거에는 어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소수당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으로 숙의를 하고 통과시키지 않고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의 수정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법사위 어떻습니까? 반대 토론도 들어 주지 않고 마구 퇴장시키고 경호권 발동해서 마구 국회 경위들 출동시키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기록원법도.

왜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하다가 퇴장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의견을 들어 주지 않고 일방적인 진행과 일방적인 표결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니까,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강행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반대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법안이 논의되기 전부터 심도 있게 토의하고 논의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얘기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야당 의원들이 왜 자리를 박차고 다 나가겠습니까?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모두 민주적인 절차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53.3%의 득표를 하셨습니다, 1475만 8000표. 국민의힘이 46.6%, 1316만 9000표를 국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퍼센트로는 6.7%입니다. 6.7%인데 승자독식의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구 64%, 즉 164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의석을 가지셨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입니다. 6.7%인데 164 대 90석입니다.

원래 진 자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졌다고 하는 승리하신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도, 지지하지 않아서 표를 던지지 않은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 국민이 얼마큼이냐 하면 1316만 명이나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 1475만이고, 1316만이면 고작 160만 명 정도가 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신 그분들을 대표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의 1316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저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1316만 9000명의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에서는 다수 의석을 뺏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변하는 1316만의 목소리마저 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숫자로 보지 마시고 46.6%의 국민의 목소리, 투표한 국민의 목소리, 1316만 9000명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설득해 주시거나 수정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그 법이 정말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의 제도 정착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앉았을 때 일단 숫자가 틀린데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당연히 통과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협치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며칠째 필리버스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필리버스터 하겠습니까? 필리버스터 말고는 어떤 것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런 말을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 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발언권 안 주고 퇴장시키고 경호권 발동하고.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1316만 9000명의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국민의힘이 민생을 갖고 발목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합의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통에서 극복해서 정말 잘사는 국민으로 살도록 만들겠다는 게 우리 모두의 희망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은데 변화는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허니문 기간인데 웬만한 거는 협치를 해 줘야지 왜 이런 것 갖고 발목을 잡느냐.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일방적인 잘못이나, 일방적으로 잘하거나 잘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걸 보면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청문회 자리 나와서 막 들이대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다 붙였던 것 같고 하던데 요즘에는 '존경하는'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이지도 않지만 서로 정말 너무나 심할 정도로 고함과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모든 법안을 조금은 심사숙고해서 조금은 고민하고 합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해소해 가면서 그렇게 협의하고 숙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저 뒤의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록 때문이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투명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왕의 권한은 어느 법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군대 통수권도 갖고 있지 않았고 사법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법전에 단 한 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처럼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유구한 것은 사관 제도와 기록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기록이 매우 중요하고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사관 제도와 현대 민주주의 국가 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시대적 배경과 정치체제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관이 있을 그 당시에는 왕이 자신의 기록을 남긴 것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엄격히 통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일지라도 권력을 감시받고 견제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삼권분립이라는 제도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와 정보공개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법이라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거를 차관급으로 그렇게 크게 늘리면서 협의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충분히, 기존에 있는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위인설관처럼 만든다는 부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인지에 대한 명문화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기록을 취합하는 사람의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서 기록이 특정인에게 또는 특정 사안에 집중될 수도 있다라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정기국회에서? 이게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법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시급성이 없는 이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왜일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까……

지금 올해 날씨가 더워서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고 엄청난 기후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1년 9월 15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엄청난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갑자기 서울의 모든 기관에 정전이 되고 그때는 뭐냐 하면 9월 9일까지 끝나야 되는, 여름철 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해서 전력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 기간을 넘은 9월 15일 날 늦더위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국가에서 써야 할 전력 예비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환제로 정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시급히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면서 원전을 축소하고 중단하고 RE100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발전시킨다고 추진했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그것을 정책했던 독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겪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으면서 2023년에 원전으로 전기에너지를 수급하는 걸 0%까지 내려가게, 발전량이 하나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겪고 있는 건 뭐냐? 결국 전기를 프랑스에서 사 오고 엄청나게 비싼 전기료를 물게 돼 있는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도 10월입니다, 거의 이제. 10월인데도 지금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기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큰 이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 RE100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는…… 물론 환경을 아끼고 그다음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전기의 불안정성이 우리 AI 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든가 국

민들이 사용하는 많은 전력을 충당하지 못해서 2011년 9월 15일 겪었던 것 같은 그 엄청난 국가 정전 사태를 겪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전 세계가 다시 원전 수출을, 원전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는 정책으로 변화되는 이 시기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22대 국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말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과 FTA 체결하고요 이라크 파병했지 않습니까? 그분 미국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작권 전환도 2006년도에 가져와야 된다고 협의 시작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그런 부분에 깨어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실리, 국가를 위한 국익을 위한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FTA라는 것이 반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한 것이며 이라크 파병,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이라크까지 보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정도의 판단을 하시는, 진짜 국익을 위해서는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느낌은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목소리 내면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 못 내는구나, 개개인은 헌법기관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AI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가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기가 간단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에너지 이런 발전기들은, 풍력발전기들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전기의 안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갑자기 더울 때 국민들이 모두 에어컨 켜면 전력 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RE100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전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 주시는 게 진짜 국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무조건 찬성하면 다 되는 겁니까? 분명히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니문 기간이라서 그런 말씀을 못 하신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런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END라고 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 갈 교류 그다음에 노멀 그다음에 비핵화, 제가 생각할 때 N은 좀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오랜 합의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92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 간에 했지만 느닷없이 북한은 93년 3월에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를 했고 그런데 2002년 북한은 다시 NPT를 또 탈퇴했습니다. 2003년에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 6자 회담을 시작했지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05년 9월에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9월에 9·19 공동성명을 체결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 포기 및 NPT 복귀를 약속하고 미국은 핵과 재래식무기로 대북 공격 의사 없음을 합의하는 9·19 공동성명을 한 지 1년 1개월 만에 북한은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0.8kt 플루토늄 원료를 사용한 핵무기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13년·16년에 두 번, 17년·18년

4월, 17년 두 번 하고 18년에 싱가포르 회담을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2018년에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하고 그러나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6차 핵실험 할 때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주장하면서 공세적으로 변모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3번 갱도가 완전히 복구됐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ICBM을 모두 고각으로만 발사했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검증을 위해서 앞으로 정상 각도의 발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 위협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발사하는 기술 능력도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2025년까지 무기 개발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받아 낸 것이 뭘까요? 경제적인 이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러시아의 군사기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많은 경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요. 이번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비핵화 없이는,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 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방송은 매우 아픈 겁니다. 대북방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대북 방송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식 실황을 북한 동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심야 방송 24시에서부터 01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6·25가 발발하면서 전시방송으로 전환해서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정전 협정을 53년도에 하고 55년부터 57년까지 남북한은 방송시설을 경쟁적으로 확충해서 전파 전쟁을 시작합니다. 즉 우리만 남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지속적으로 방송시설을 통해서 대남 방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북 방송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하고 1972년 11월 11일 비로소 중단을 합니다.

북한이 우리랑 대화하면서 요구한 게 대북 방송의 중단입니다. 그러다가 80년 9월 다시 북한이 먼저 대남 방송을 재개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4년 6월 4일 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하면서 남북이 선전 활동을 중단하자, 그래서 우리 라디오의 자유의 소리 방송도 중단하면서 같이 중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2010년도 천안함 폭침이 3월 26일 날 있고 자유의 소리 방송이 재개됩니다.

이후 2015년 8월 25일 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합

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해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사유는 고위급, 장성급 또는 쌍방 간에 합의가 있는 정도 또는 서로가 큰 대화의 채널을 재개할 때 중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25년…… 그러다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중단했다가요 2023년 1월에 북한 무인기가 침범해 오고 24년 오물풍선이 오면서 6월 9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스피커 다 철거했던 것 다시 설치해서 합니다, 23년에.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대화나 북한의 입장 변화 없이 25년 6월 11일 날 일방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는 줄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 즉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이크로 소리 지르고 음악 틀고 노래 불러 주는 그런 거냐? 대북 심리전은 군사정보지원작전이라는 군사작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무력행사 없이 북한주민들과 군인들한테 정보를 알리고 자유세계의 진실을 유입시켜서 사상을 동요시키고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작전입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주민은 사상적으로 동요되고 체제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또 군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개원하고 통일부장관이 와서 여기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주민이 가장 동요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송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탈북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6시 내고향'이 가장 동요가 됐다. 왜? 북한도 평양에 있는 사람 다 잘 먹고 잘삽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 보면 동요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6시 내고향'을 보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사는 걸 보면서 동요가 됐답니다.

북한의 병사들은 한 10년 근무합니다. 월급도 안 나오고 부식도 안 나와서 본인들 스스로 텃밭을 일궈서 곡식을 마련하고 삽니다. 그들에게 자유문명세계의 자본주의 맛을 들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합니다. 그래서 탈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외부세계를 동경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는 확성기를 일방적으로 단절했습니다.

만약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서 정말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평화를 이끌어 올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단은 했지만 빌미가 없어서 다시 개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이 생각할 때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겁니다. 평시에 우리는 북한에게 어떤 위협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기록원법처럼 특별히 모멘텀이 중요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런 법을 만들고 기관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보의 문제라든지 간첩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지금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할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그야말로 허니문 시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한두 개 법안을 막자고 이렇게 밤을 새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107석의 국민의힘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 나온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민주당의 행태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독재자들의 방식과 너무나 닮아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특히 5공화국,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탱크를 앞세운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던 시대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정치인에 의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 질식당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실제 독재자는 법을 폐기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법을 자신들의 무기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의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킵니다.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방송도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켜 가기 위해서 다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면 소수당이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국민 1316만 9000명의 지지를 받은 당입니다. 1475만 8000명의 지지를 받은 53.3%라고 나머지 46.6%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즉 소수에 대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호 관용이란 나의 정치적 경쟁자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와 통치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 외견상 숫자로 보면 172 대 107이니까 대항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 차이는 6.7%밖에 안 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역구에서도 46.6%는 비율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밤을 새워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정상적인 상임위라든지 정상적인 의회의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 관용이란 그처럼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들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역자가 아니라면 애국적인 경쟁자로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당 대표를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2번 찍은 사람을 모두 땅에 묻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지,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친일 세력도 아니고요 내란 세력도 아니고요 검찰 독재 부역자도 아니고요 청산해야 할 적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와 타협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을 닫은 상대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밤에 하루에 1건 막자고 24시간을 버티고 힘겹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 화재로 647개의 정부기관이 마비됐으면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그것을 숙

의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일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이 중요한 시간에 상임위에서 논의됐어야 할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간을, 밤을 새워 가며 이야기해야 되는 허공의 메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도적 자제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지혜가 제도적 자제입니다. 의회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제도적 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 전의 방송 3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이런 모든 법은 협치와 숙의가 없는 의회 독재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말한 독재자의 가능성을 판별하는 네 가지의 리트머스,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경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폭력에 대한 용인, 언론과 반대자의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지, 이걸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독재자의 세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4·19 혁명과 유신에 맞선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그렇게 피와 땀으로 일군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후대한테 잘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구 휘두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일방이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협치를 하려면 가진 자가 많은 것을 좀 내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 국회기록원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22대 이후에 다수당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공히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가 현재를 기록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 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의 하나였으니까.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에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야당일 때는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이끌도록 하는 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여당일 때는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우리 세대에게 물려줄 정말 번영과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핀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 이제 그 힘을 좀 아끼고 합쳐서 다른 곳을 향해서 그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첩법 빨리 개정해 주시고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정책도 좀 상대방과 균형을 맞춰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많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위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개방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길을 열어 주시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중국의 이권이 개입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산업에 국가의 경쟁력을 너무나 낭비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필리버스터 하는 거라서 쉽지 않았지만 나름……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콩나물이 자라듯이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콩나물 자라듯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의원님, 계속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준혁)

(06시22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김준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지역 김준혁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특히나 핵심적인 내용이 국회기록원 설립과 관련된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내용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회기록원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회의 투명성 또 국회의원 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그분이 했던 행적과 발언들을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조사하고 또 잘 남겨 두고 이후에 그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나 이 국회기록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생성된 어떤 기록물 또 관련된 사건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국회에서 이루어진 회의 의사록,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고 연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반대한다는 명분,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까 강선영 의원님 차분하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계속 들었습니다. 강선영 의원님이 시작하신 시간이 한 2시 반 좀 넘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제가 계속 들었는데 국회기록원법 이야기는 아주 조금 하시고 계속 핵문제 이야기 등등 전혀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 유상범 의원님도 주로 그저께 나왔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검찰의 해체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두 분 의원님이 필리버스터의 본질이, 이번 내용이 국회기록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두 분이 한 8시간 정도 하셨는데 8시간 중에 국회기록원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건 한 20여 분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위인설관이다, 말도 안 된다. 차관급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국장급이 잘하고 있는데 왜 차관급을 만드는 거냐? 물론 국회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 이것 국회의장님의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국회의장님이 누구 숨겨 두고 아는 사람 차관급으로 내세워서 뭔가 자리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의장님, 맞는 겁니까? 아닌 거지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

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차관급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차관급이라고 하는 지위가 갖고 있는 중량감 때문입니다. 지금 국장급, 물론 그 국장들도 일을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 차관급 정도 되는 분이 국회기록원장을 맡으면 어떤 외압이라든가 또 국회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기관과의 형평성, 국회도서관장이라든가 입법조사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그래서 국회 내에서 독자적으로 또 나름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차관급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들……

그런데 계속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정부기관에서 차관급을 만들게 됐을 때 조직도 늘린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가만있겠냐, 지금 정부에서 뭘 만들려고 하면 여당 의원들도 가만있겠느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대등한 기관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919년 우리가 처음으로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할 때, 그때 먼저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입니다. 이 의정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임시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이전에 의정원, 즉 국회가 존재함으로써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만큼 국회라고 하는 존재는 삼권분립 체제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차관급 제도를 만드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갖고 있는 지위와 역할, 이 속에서 국회의 역할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차관급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8시간 동안 두 분이 하시는 과정에서 한 30분도 채 안 되는 내용에서 일부 나왔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이 국회기록원을 만들어서 기록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훼손합니까?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기록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내용들도 ‘바이든-날리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당시에 바이든-날리면 이야기할 때……

김성원 의원님 혼자 계시는데, 나머지 의원님들 그때 제대로 대응하셨는지 제가 참 물어보기도 민망합니다.

실제로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오천만 국민 모두가 방송에서 보았지요. 그것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그것을 조작하는 것 이것이 거꾸로 문제인 것이다. 왜 이런 내용을 조작하느냐라고 하는 내용, 저는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사실은 기록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국회가, 국회기록원이 의도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조선시대도 조작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이따 제가 국회기록원의 어떤 앞으로의, 그 이전의 역사, 왜 국회기록원이 존재해야 되는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를 기록하고 잘 보존해 왔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술이부작(述而不作)'. 저술은 하되 창작, 조작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 기록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술이부작.

물론 이 술이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이야기하기는 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국 역사에서 나왔던 어떤 기록의 형태와는 전혀 달라요.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뛰어났던 기록은 명나라 역사 명사, 청나라 역사 청사 이건데 중국의 수많은 역사, 25개의 나라를 정리해서 우리가 25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25사 전체의 내용보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이 갖고 있는 방대한 분량이 훨씬 더 크고 내용의 정교함도 훨씬 더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기록을 소중히 여기고 기록문화를 튼튼히 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갈 수 있었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술이부작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감히 왕도 권력자도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 이 현실에서 언론이 눈을 뜨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이렇게 풍부하게 나오고 있고 또 방송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통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이라는 건 이건 다 생중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상임위에서의 어떤 발언과 그리고 이 본회의장 안에서 하는 발언들 이거 모든 것들이 생중계되고 또 여기 계신 속기사님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을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다가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국회기록원을 갖다가 그냥 반대, 이건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싶어서 반대하는 건데 그런데 반대하는 나름의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위인설관이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내용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국감 앞두고 지금 시급한데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 국감은 국감이고 국회기록원은 국회기록원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국회기록원이 지금 22대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님의 제안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대 때부터 계속해서 국회기록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조직을 왜 늘리냐라고 하는 논리도 막 아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정부가 대통령기록관 만들고 그리고 국가기록원 만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그 이전에 정부기록보존소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기록보존소가 있었을 때 그때도 일을 열심히 했었지요.

그렇지만 정부기록보존소와 국가기록원으로 변경된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존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존하는 역할이에요. 보존하는 역할과 국가기록원으로 바뀌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국가기록원은 그 국가 기록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국회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 앞에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 내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보존 기능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관련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다 청원했을 때 그것을 다 공개해 주는 역량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 안에 기록연구사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사의 중요한 밑거름, 사료로 쓸 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국회기록원을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현재 국회의원과 국회 내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바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 뒤에 대한민국이 21세기 사회에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세계 선진국가로 나아가는지, 그것이 국회 안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미래를 보여 주기 위해서. 미래에서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다가 폐기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기관들 보통 30년이면 다 폐기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이었는데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학교수를 했는데 대학교수 하기 전에 저 기초자치단체 말단 공무원을 만 9년을 했습니다. 학예연구사라고 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만 9년 일을 했어요. 수원시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을 복원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직공무원 된 사연은, 대학에서 시간강사 하다가 너무 시간강사가 열악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2002년 10월에 경기도에서 나온 공채시험을 봤어요. 여기 대한민국 삼백 분 국회의원분들 중에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이나 기술고시 출신들 많이 계실 텐데 저처럼 6급 이하 공채시험을 본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만 9년을 일했습니다. 그 9년을 일하는 동안에 정말 좋은 기록들을 다 5년이 지나면 공무원들이 귀찮아 가지고, 그걸 더 보존하기 귀찮으니까 캐비닛에 있었던 거를 다 폐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수원시 도시계획도. 예전에는 큰 괘지라고 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서 하는 거 있습니다, 차트 같은 거. 이런 차트 같은 걸로 수원시 도시계획도를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봤던 게 80년대 수원시 도시계획도, 90년대 수원시 도시계획도였는데 그것을 보게 된 것은 창고를 치우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이거는 수원의 완전한 산 역사인데 이것을 갖다가 보존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거를 따로 다 모아 놨어요. 따로 다 모아 놔 가지고 그것을 이제 따로 정리를 해 놨지요. 나중에 수원에 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이걸 박물관에 둬 가지고 영구 보존해서 수원이 어떻게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됐는지……

제가 어려서 수원서 자랄 때 한 25만에서 30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한 70만으로 갑자기 늘어나더니 90년대 후반 가 가지고 10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도시가 갑자기 100만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사이에 급격한 도시계획 변경이 생겼는데 그 도시계획 변경이 생긴 것들을 당시 차트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종이에, 큰 대지에다가 정리해 가지고 막 쌓아 놓은 거지요. 이거 자체야말로 엄청난 사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보관해 두고 다른 공무원들이 왔을 때 이거는 조만간에 박물관에 갈 거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싹 없어진 거예요. 싹 없어진 게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모 사무관 한 분이 '이런 거 왜 귀찮게 여기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거야. 없애 버려' 그러니까 당시 한 분이 김준혁 박사님이 이거 꼭 두라고 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두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야, 필요 없어. 다 없애 버려. 이거 뭐 누가 본다고', 이거 누가 본다고 이러면서 다 없애 버린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수원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때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이 귀찮다고 해서 관련 문서들을 파기하고 문서들을 버려 버리고…… 그러면 깨끗하지. 자기 책상도 책꽂이도 창고도 다 깨끗해지지. 깨끗해지는데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후대에다가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것을 알려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국회 내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들 계시겠지만 그러나 국회 내 여러 가지 기록물보존소 같은 경우도 5년 지나면 폐기, 10년 지나면 폐기, 20년 지나면 폐기, 30년 지나면 폐기, 이렇게 폐기되는 내용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속기록 하고 있지만 국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 활동해서 기록 남겨 놓고 본회의 하면서 기록 남겨 놓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장님과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정기국회 과정이나 임시국회 과정에서 어떤 법안을 올리느냐 마느냐 가지고 협의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남겨 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대화하고 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가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정치가 발전하고 투명해집니다.

기록은 투명한 것이고 투명한 것은 결국 공공성에 대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공성에 대한 반영들은 결국 모든 국민들이 깨닫게 하고 많은 정보를 알게 해서, 그래서 보다 높은 정치의식을 나아가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마도 우원식 의장님께서 바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강력하게 국회기록원에 대한 설립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감을 앞에다 두고 왜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 저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국감은 국감이고, 국감은 우리가 다 열심히 기존에 준비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 국회기록원은 기록원대로 하루빨리…… 왜 그러느냐? 지금도 사장되는 문서와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고 지금도 빨리 이것을 스캔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록들을 남겨 놓고 또 많은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 이분들 구술 자료를 남겨 놨는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하나도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화재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 수많은 조사들을 해 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제가 지금 초선이라 예산 그것까지 세울 능력은 안 되니 우리 김영호 교육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래서 같이 다 모여 가지고 그것을 2026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과거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역사를 정리해 놓은 기관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역사와정의위원장 김용만 위원장님께서 김영호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북 확성기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강선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앞방에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자주 뵙고 보좌관분들하고도 서로 가깝게 지내고 제가 인사도 잘하고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더 그분이 하셨던 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계속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지요. 자유롭게 이야기해야지요. 그분이 갖고 있는 보수적 사고와 관련해서, 특히나 또 그 유명한 여군 장군 아닙니까, 투 스타까지 가신? 그렇기 때문에 나름 투철한 국가의식이 있고 또 애국적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진정성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대북 확성기를 일방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철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한 것은 말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남과 북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형이 배려하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고 배려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막 같이 고집 세워서 '너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선비정신…… 지난번에 송언석 원내대표님이 여기서 선비정신 이야기하던데 선비정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삼가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그리고 말도 신중히 하고 행동도 신중히 하고 그리고 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것을 배려한다는 것이지요. 삼가는 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스스로 가…… 우리 거친 표현으로 쓰자면 나대지 않는 것 있지요? 그게 또 삼가는 것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진짜 선비정신의 핵심은 뭐냐? '손상익하(損上益下)' 이 네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윗사람이 보고 이익은 아랫사람이 갖는다. 물론 이것은 예전에 공자가 이야기한 주역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손상익하.

그런데 손상익하를 '손해는 윗사람이 보고 이익을 아랫사람이 갖는다' 이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익이 생기면 윗사람은 덜 갖고 아랫사람에게 더 나누어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기득권들 보면 이익이 생기면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 더 많이 갖고 아랫사람들에게 조금 주려고 하거든.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이 오래가고 정치인이 오래가고 역사 속에서 남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손상

익하 해야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채근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진짜 너무너무 재미난 이야기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게 나왔어. 맛있는 게 나오면 서로가 맛있는 것을 누가 먼저 먹느냐, 이것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생기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윗사람이, 리더가,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 맛있는 것을 먹지 말고 먼저 젓가락으로 집어서 앞에 있는 사람의 밥그릇에 놔 줘서 그 사람이 먹게 해 줘라. 그러면 그 사람도 먹을 것,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식 의원님,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김대식 의원님이 저랑 밥 먹을 때 맛있는 회 저한테 먼저 주시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야. 우리 형님이 그런 분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 제일 친한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네, 김성원 의원님하고.

바로 이런 겁니다, 손상익하. 맛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 이게 양보지요. 양보는 곧 배려입니다.

제가 왜 손상익하 이야기하느냐? 조선시대 선비정신 왜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재명 정부가 손상익하의 개념으로다가 지금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겁니다. 지금 북한은 뭔가 교류하고 싶고 미국하고도 지금 대화 나누고 싶고 남쪽하고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 자존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한다고 바로 대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 대화할 장에 다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도 파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강원도 고성까지, 이것은 이 땅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해 5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려서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셔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4학년 때 백령도에서 살았습니다. 참 정말 특별한 기억이지요. 그때는 뭐 전기도 없었지요, 호야 켜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즘 학생들한테는 호야 이야기해 봐야 호야가 뭔지도 몰라요.

수원 살다가 백령도로 가게 됐는데 당시 인천 연안부두에서 보름에 한 번씩 배가 떴는데 배 이름이 옹진호였지요. 18시간을 갑니다. 요즘은 쾌속선으로 4시간이면, 지금 3시간 40분이면 가는데 18시간. 처음에 연평도 들렀다가 그다음 소청도 들렀다 대청도 들렀다 백령도 가게 되지요. 부두도 없어 가지고 종선이라고 해서 저 바다 저 끝에 있으면 작은 배가 나와 가지고, 통통배가 나와서 한 30명씩 이렇게 그 어두운 밤에 막 데려다가 나르고, 정말 어려서 그 배 탈 때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군인 트럭에—GMC라고 하는데—타 가지고 저 멀리 우리가 가야 될 곳까지 갔지요. 장촌이라는 마을입니다. 지금 그 마을이 백령도 냉면으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됐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야, 이것 내가 어려서 살던 마을이 지금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참 재밌기도 하고 저기 한번 다시 가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3학년 때 친구였던, 김영훈이라고 하는 친구 아버지 집에 냉면기계가 있어서 겨울에 저도 그 냉면을, 메밀냉면 뽑아서 먹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게.

그런데 백령도에 그때 당시에는 8시 이후에는 다닐 수가 없었고 그리고 모든 창틀마다 검은색 천으로 돼 있어서, 8시 이후에 어떤 불빛도 나갈 수 없었는데 거기도 당시에 대북 확성기가 있었고 백령도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전쟁이 날까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경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접경지역 파주에서 군대생활을 당시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경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여야 모든 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접경지역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 대부분 다 보수적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으냐? 본인들의 생존적 측면에서 안정감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대북 확성기 중단된 다음날 그때 명파리, 강원도 고성 맨 끝의 명파리를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 의원실 워크숍이 있어 가지고 고성연수원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좌진 전체하고 다 같이. 갔다가 우리가 '야, 여기서 있을 게 아니라 명파리 마을……', 명파리 마을이 가장 끝 마을입니다. 가장 끝 마을인데 그래서 이 마을분들 대북 확성기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가 보자 그래서 갔더니 주민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과거 금강산 관광할 때 그때 만들어졌던 여러 식당, 무슨 슈퍼 이런 게 지금 다 폐점이 돼 가지고 없는데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명파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살 것 같다, 대북 확성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리고 대북 확성기 이것 때문에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그래서 좀 걱정이었는데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단순하게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어떤 대통령의 조처라기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이자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사실 국회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게 됐느냐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생성된 어떤 기록물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내용들 이런 것들, 특히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의사록, 문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 것 아니지요? 국민들한테 공개도 하지요. 국민들도 이제는 정치의식이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토론 끝나고 나면 전광판 이런 것들 다 공개되거든요, 여기 누가 됐는지. 그래서 어떤 분 기권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 있는 부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단계까지는 다 온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누었던 여러 내용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국민들이 알고 싶을 때 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국회기록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매우 쉽고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 수 있게 공개를 해 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또 연구 목적도 같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록을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태종이 말입니다, 태종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태종은 무예도 출중하고 또 고려 말의 문과 합격자거든요. 그래서 맨날 신하들하고 대화할 때 '나 문과 합격자야' 이런 이야기 실제로 많이 합니다. 태종이 이방원 시절에 그 유명한 삼봉 정도전, 포은 정몽주 밑에서 공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포은 정몽주, 정도전과 사형제지간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유학 공부를 같이 했지요. 엄청난 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공부 같이 하고 그걸 통해서 아들한테 그들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었지요.

태종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무예도 출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개국하는 데 최고 1등 공신이었잖아요. 전쟁터 나가서 싸운 장본인입니다. 거기다가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일으키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왕이 됐어. 왕이 돼서 사냥을 나갔다가 실수해서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무예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말에서 떨어졌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사관한테 '내가 말에서 떨어진 것을 기록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사관이 듣겠습니까? 사관이 들은 척도 안 했지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실록에, 사초에다가 '왕이 나에게 말에서 떨어진 걸 기록하지 마라라고 하는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라고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시대, 봉건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얼마나 이 기록의 투명성과 후대 이 기록물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인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 모두가 다 더욱더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투명해지게 되면 그 뒤에 더 많은 민주적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저 이 시간에 될 줄 알고, 저는 이 시간부터 시작할 줄 알고 알람을 맞춰 놨더니 이 시간보다 일찍 해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괜찮나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또 이렇게……

(「들어 주면 또 재미있게 하는군요」 하는 의원 있음)

저 원래 필버 대상도 아니고 어제 들어오다가 갑자기 필리버스터 하라고 해 가지고 그냥 뭐, 저 원고도 없이 지금 5장……

(「정조에 대해서 활용을 좀 더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것을 막는 거냐, 도대체 막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실 우리 역사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이렇게 단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와 비아의 투쟁을 바로 우리 민족과 외세와의 투쟁으로 생각

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거지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니까. 그런데 단재 선생님이 이야기한 본질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 바로 내부의 투쟁입니다.

그 내부의 투쟁은 어떤 거냐? 바로 사대파와 자주파의 투쟁이지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야 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괜히 중언부언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방송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 그냥 말씀 좀 드립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쓰셨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조선 5000년대 일대 사건이라고 해서 묘청의 투쟁, 우리는 흔히 국사 시간에 묘청의 난 이렇게 배웠지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기득권의 입장에서 정리된 기록이지요. 묘청이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난을 김부식이 제압했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재 선생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지요. 이것은 자주파 혹은 국풍파 대 사대파의 싸움이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늘 그래 왔어요. 백성과 함께하는 세력들, 우리가 지금은 흔히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민주주의의 앞선 단계,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대신하는 언어는 민본주의입니다, 민본.

우리 민병덕 의원님 변호사 시절의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민본이었거든요, 민본. 모르셨나요? 안양의 법무법인 민본.

그래서 항상 민본주의를 계승하는 민본의 개념, 민이 중심이, 근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 그렇기 때문에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 농자, 농사짓는 사람이 천하의 큰 근본이다. 왜 그러냐? 당시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이 중심일 수밖에 없으니까, 상업은 일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조선 시대 때 상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조 시대 때 상업을 활성화하고 당시 상공업 진흥론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수레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이 앞에, 노량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여기 불꽃축제 한다고 그래서 차 진입 안 돼서 수원역에서 전철 타고 올라와서 노량진에서 환승해서 들어왔는데 노량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원까지 소위 말하는 신작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흥대로를 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시흥'이라는 말이 1795년에, 1795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몇 년이 된 겁니까? 한 230년, 정확히 230년 전에 정조가 처음으로 시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거기가 금천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흥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나라의 흥함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시흥이라는 이름을 처음 했는데, 이때부터 상업이 활성화된 건데 그 전에는 농업이 중심일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농자천하지대본야, 이것은 곧 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민본주의가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것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혹은 선비일 수도 있고 혹은 평민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지요.

민본을 중심으로 여기는 자주파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큰 강대국에 협력해서 그들의 한편이 돼서 혹은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세력이 돼서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것이 물론 단군시대 때부터 지속돼 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우리가 본격적인 역사 서술이 기록된 그 시대부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재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조선 5000년대 일대 사건, 가장 최고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바로 묘청, 정지상, 백수한 이런 사람들과 당시 고려시대의 개성을 중심으로 했던 이 기득권 세력들, 이 기득권 세력들이 민본은 도외시하고 당시 중국 송나라와 연계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백성들의 삶은 쳐다도 보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과 대등한 국가, 중국에 예속되지 않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싸움, 이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한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파와 자주파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실은 자주파의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사이에 뭔가를 하려면 체계적이었어야 되는데 체계적인 것보다 사실은 감정적이고 그리고 비조직적인 거 이게 문제였던 거지요.

그래서 묘청이 서경으로 가 갖고 대화국이라고 하는 나라, 큰 대(大) 자, 화할 화(和) 자 해서 대화국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당시 핵심 멤버였던 정지상은 개성에 남아 있었거든,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한테 가장 존중받던 정지상은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지요. 위대한 시인이자 위대한 혁명가 정지상은 그렇게 사라졌고 결국은 조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묘청과 국풍파 세력들은 제압될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 한 분 계시는데,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책에 그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신영복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해가 언제였느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그다음에 있었던 총선이었습니다.

제가 수원 지역에서 그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총선만큼은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체 막 모아 가지고 신영복 선생님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통혁당 사건으로 정확히 만 20년 사셨거든요. 음력 생일날 들어가셔서 음력 생일날 나오셨어요, 딱 만 20년.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감옥에서 나오고 나셔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복학하고 나서 선생님 찾아뵀었지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대학생 애가 와 가지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잘 읽었다고 그러면서 뵈러 왔다고 해서 깜짝 놀라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일들을 하고 선생님이 강원도 내린천의 개인 산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더불어숲학교 할 때 제가 수원에서…… 저는 지금도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면허 자체를 한 번도 따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운전면허가 없는 제가 내린천 거기까지 그냥 버스 갈아타고 갈아타고 해서 매달 빠지지 않고 1박 2일씩 다녔거든요.

(「무면허 아니지요, 무면허?」 하는 의원 있음)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운전면허 안 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술 먹고 혹시 음주운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라고 해서 면허 자체를 안 따고 평생을 제가 뚜벅이로 살았지요. 수원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면허는 지조인데 무면허운전은 법 문제지」 하는 의원 있음)

(「운전을 못 하니까 그런 취지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차병 출신, 조종수 출신인데 운전을 얼마나 제가 잘하는데…… 제가 육군기갑학교 1049기입니다. 국회에 기갑 출신이 양부남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님은 장교 출신이고 저는 사병 출신이고. 그래서 양부남 의원님이 우연찮게 저 그때 윤석열 탄핵 때 광화문에서 단식농성할 때 양부남 의원님이 응원 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잠깐 앉아서 군대 얘기하다가 자기는 기갑 출신이다 그래서 저도 기갑 출신인데 파주에서 2기갑 6전차에 내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자기 1기갑 출신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김준혁 의원은 줄도 백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구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갑 가는 사병들은 줄도 없는 애들이 다 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대학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렵게 어렵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참 힘없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한 두 달 전인가 우리 보좌관들 다 불러 가지고 소고깃집에서 거하게 한번 밥 사 주셨습니다. 밥 사 준 이유에 대해서 유일한 기갑 출신이라 자기가 이렇게 양쪽 보좌관들, 그래서 양부남 의원님 보좌관실하고 저희 보좌관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아주 그냥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운전도 잘하는 사람인데 안 땄다는 거지요. 지금 샛길로 나가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사대파, 국풍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사대파가 갖고 있는 힘들,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신영복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여튼 그때 신영복 선생님이 다 오셔 가지고, 김창남 교수를 비롯한 더숲트리오까지 같이 오셔 가지고 공연도 하고. 다 무료로, 강사비 10원도 안 받으시고, ‘이거 지역에 총선하는 데 시민들 연대해서 써라’. 그때 강연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걸 나중에 ‘강의’ 내용에 쓰셨는데,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충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김대중·노무현 시절이 지속이 되면서 그때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공직자들도 자율성을 가졌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시작이 됐었을 때 아주 우연치 않게 세종에서 당시 문체부차관 하셨던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한국체대 총장 하시려고 하다가 못 하셨던 분이셨는데 문체부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공직자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고 실제로 3개월간 치료도 받으셨다. 왜 그러느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직자들한테 자율성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창조적으로 일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고 해서 정말 노무현 정부 시절이 자기 인생에서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너무 통제를 하고 자율성은 사라지고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걸…… 그리고 기존에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또 문화가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통제됐다. 그래서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컸고 공직자로서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나

중에 끝내 명퇴하고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과 이명박 정부 시절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뭐 대단할 건지, 공무원들 그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과 바로 대통령이 자기가 그 세력들, 정확히 말하면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제하고 압박하게 되면 국가의 발전은 있을 수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더 열려 있는, 그리고 공직자들이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토론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당시에 신영복 선생님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본인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간 한국 역사를 다시 공부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 역사를 다시 공부했는데 그때 내린 결론, 그 결론은 뭐냐? 조선시대 때 노론 세력이, 사대파 노론 세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주국가가 아니다. 조선은 철저하게 중국에 사대해야 된다. 그리고 조선의 사대부들은 모두 주자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걸 우리가 흔히 역사적 용어로 주자 도통주의 혹은 주자 존숭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자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고 조선 선비들은 따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조선 선비들은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의견을 내놓지 마라. 그것은 오로지 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 만약에 주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문난적이다. 사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공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문이. 사문은 이을 사 자, 주나라 문왕, 문왕을 잇는다. 그래서 공자가 자신을 사문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사문의 난적, 공자의 난적이다.

이것 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국가보안법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까 강선영 의원님이 반공법 이야기, 간첩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오래된, 낡은, 철 지난 냉전 이데올로기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럴 것들이 아니지요, 지금. 간첩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을 유출하고 빼 나가는 산업스파이들 이런 부분들.

제가 여기까지 더 이야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당시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주고 사문난적들은 무조건 다 사형을 시키고. 이따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백호 윤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조선의 선비로서 조선 선비의 입장에서 공자의 학문과 맹자의 학문을 재해석하겠다'. 이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조선 선비들은 공자나 맹자나 당시 제자백가의 학문을, 어차피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출발한 건 사실이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보고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화담 서경덕이라고 하는 학자가 위대한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학문이 들어왔지만 화담 서경덕이 그 학문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새롭게 해석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담 서경덕의 제자가 그 유명한 토정 이지함, 마포에서 거처했지요. 원래 저 충청도 보령 분인데 일찍 올라와 가지고 마포에서 토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그리고 쇠로 만든 갓을 썼잖아요. 갓 쓰고 다니다가 어디 가면 갓 딱 벗어 가지고 불 피워 가지

고 갓에 놓고 밥 해 먹고,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밥솥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러고 나서 싹 씻어 갖고 다시 쇠로 된 갓 딱 쓰고 다니고. 토정 이지함, 이런 실용적인 학파, 실제로 화담 서경덕부터 토정 이지함의 이 학문들이 나중에 우리가 당파적으로 보면 소론으로 계승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론의 학통이 다른 당파에 비해서 훨씬 더 개혁적이다. 이 소론 학통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다 독립운동 계열들, 우당 이회영 선생님 다 그 계열들이고 여기 김용만 의원님의 증조부이신 백범 선생님도 다 소론 쪽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소론 쪽이 나중에 동학하고 다 연결되거든.

실제로 백범 선생님,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백범 선생님 다 동학 접주, 16세에 소년 접주 한 분 아닙니까? 당시에 열여섯 살에 접주 한 분은 백범 선생님밖에 없거든. 그런데 특히나 소론 쪽 분들이 동학과 그대로 또 연결이 됩니다. 영남 남인들도 연결되지만 그러나 소론 쪽 분들이 더 강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 소론이 나름의 어떤 독자적인 사고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노론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노론들의 주자 존숭주의, 주자 도통주의 때문에, 이 기득권들 때문에 실제로 국가가 개혁하고 발전하기가 어려워. 노론들은 소위 말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어요. 이 전가의 보도가 뭐냐, 바로 주자를 존숭하지 않으면 다 사문난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18세기에 개혁적 실학자들이 서양의 학문을 들여오자, 서양 사람들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사문난적으로 몰아붙이고 조금 더 개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학죄인, 천주교와 조금 더 연결돼 있다 그러면 사학죄인으로 몰아붙여 다 죽여 버리는 이게 바로 요즘에 국가보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너 빨갱이야. 손가락질해서 빨갱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 기간에 죽었습니까.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사상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를 알기나 합니까, 사회주의를 알기나 합니까? 그런데 그냥 빨치산들이 와서 뭘 해…… 그러면 짐 날라 준 죄밖에 없는데 짐 날라 준 것 때문에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붙여 죽이고 연좌제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제주 4·3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남로당 당원입니까? 아니지, 그냥 평범한 제주도민들인데. 당시 1946년 3월 1일 날, 해방된 지 1년 채 되지 않은 3월 1일 날 3·1 독립운동일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당시 경찰들의 횡포에 항거하다가 그 아이가 죽고 어머니가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고 많은 제주도민들이 경찰에 항의한 것,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들이지요. 그것을 경찰이 발포하면서 그래서 거꾸로 시민들을 살육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47년에 4월 3일 날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당시 남로당의 획책이라든가 남로당이 조작, 진두지휘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남로당으로 몰고 빨갱이로 몰아붙여 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그런데 당시 미군들이 오라리 방화 사건을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면, 이 전가의 보도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님은 그 노론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변했다. 친일파로 변했고 그 친일파들이 온갖 기득권을 이루다가 결국

해방 이후에 친미파로 변했다. 친미파로 변했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다.

제가 어려서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편소설 현진건의 '빈처' 그리고 음악책에 나오는 현제명, 미국에서 이렇게 있었던지 어디 가서 하여튼 노래…… 그리고 김소윤이었나 김소원이었나 하는 분이 이렇게 썼던 단편소설, 서정주 시인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노래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아니, 우리가 얼룩송아지 보기도 힘든데, 다 누렁 송아지인데 왜 우리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얼룩소도 예쁜 소'…… 아기 소도 예쁜 소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다 친일파 출신 문인들의 시와 단편소설을 배운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했고 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걸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영복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것은 단지 정치·경제·사회·문화, 사법권·입법권·행정권 중에 행정권만을 장악했을 뿐이다. 겨우 행정권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해 나갈 수 없었다. 그나마 DJ라고 하는 탁월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권능, 그 풍모로다가 사법부와 입법부 쪽을 조금 누를 수 있었다. 그리고 재계 쪽도 누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지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겨우 행정 권력만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권력을 뭘 갖고 있었어? 기억나시잖아요. 대통령한테 평검사들이 맞서고, 대통령한테 평검사가 '몇 학번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모욕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았지만 평검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평검사들과 대화를 나누게 한 청와대 고위 관료들, 나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무부장관이 하든가 다른 사람들이 했어야지 왜 대통령을 내세우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입법부, 사법부 플러스 정치세력들, 재계 세력들, 언론 세력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연대해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뭐든지 잘못되면 '다 노무현 탓이야' 이렇게 말을 만들어 내고 노무현을 욕하는 것이 시대의 자랑이고 술자리에서 노무현을 욕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게 만든 아주 기이한 현상들……

그만큼 이 기득권 세력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이 5000년 동안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5000년 동안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민주당이 제1당이 돼서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이상한 명분으로 막아 내려고 하는 겁니다. 협치를 안 한다, 일방적이다, 독재다. 우리는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건데, 과거 2000년간 있어 왔던 기득권들의 잘못을 개혁하려고 하는 건데 이 개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개혁을 하는데 저들의 저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 저항을 우리가 막아 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이 또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나머지 진보 개혁 세력들이 함께 연대해서, 진보당 포함해서 함께 연대해서 지금 이 잘못된 것

을 시정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민주주의의 시대가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지나왔지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나온 거지요. 윤석열 정부는 보수정권 내에서도 이런 정권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아주 가장 강력하게 박정희 정부 시절,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비난하고 혁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했던 일들은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는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경제개발 의지조차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권력과 연대해서 해 먹기 경쟁을 했잖아요, 해 먹기 경쟁.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중심으로 모두 곳곳에 해 먹기 경쟁. 하다못해 무속 세력들, 사이비 무속 세력들이 연대해서, 함께 참여해서 해 먹기 경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몰라도 돼야 될 걸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야. 관봉권이 뭔지를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평생 관봉권을 한 번도 안 봐도 돼. 그런데 왜 우리가 관봉권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관봉권의 띠지가 어떻게 분실됐는지 그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 그런 것 알 필요가 없었거든.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윤석열 정권 때문에 관봉권이 뭔지도 알게 됐고 그 띠지를 분실해도 검찰 수사관이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들, 검사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온갖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마이크 일자로 세워 올리고.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바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믿는 구석은 바로 뭡니까? 2000년 동안 이어 왔던 자신들의 권력 때문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나름 사대파들도 자주적인 사대파들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보면 김유신, 김춘추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신라가 통일을 위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비난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당시 신라 입장에서 보자면 그럴 수도 있었지요. 왜 그러냐? 고구려와 백제의 압력이 너무 컸고 실제로 신라 눌지왕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흥왕 이전까지 신라의 왕의 임명은 고구려에서 다 했습니다,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신라에 군대를 보내서 통제를 하고 신라는 일본의 압력도 받았고. 실제 당시 일본은 백제의 속국이에요. 일본은 당시 왜 아닙니까, 왜. 이름이 왜야. 왜라고 하는 이름은 백제가 지어 준 거예요. 우리가 왜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나쁜 의미로 이야기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상도에서 제일 나쁜 욕이 뭐냐? '야, 이 왜놈 똥 같은 놈. 야, 이 왜놈 똥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X', 'ㅂㅅ' 이런 것 아닙니다. 경상도에서 제일 나쁜 욕은 '야, 이 왜놈 똥 같은 놈아'야. 왜놈도 나쁜 놈인데 왜놈의 똥은 더 나쁜 거잖아. 그래서 왜놈 똥이 제일 나쁜 욕이에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역사 용어로 인식이 되는데 왜라고 하는 말은 공경할 왜 자입니다. 백제를 공경하는 나라예요, 백제를 공경하는 나라. 그러다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일본이 원래 백제의 속국이고 그래서 백제 왕 빼고 나머지 왕자들은 일본 가서 있다가 잘못되면 또 그 백제에, 있던 왕자가 돌아와서 백제 왕 하는 거야. 이게 무령왕이 그렇게 왕이 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일본에서 배가, 함대가 오고 했지만 일부러 늦게 온 거지요. 그러고 나서 백제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가서야 이름을 일본이라고 지은 거예요, 해가 뜨는 근본의 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욱일승천기도 만들고 막 하는 건

데 중요한 거는 당시 신라가 열악했고 힘이 없었고 그래서 뭔가 이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삼국을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인 것 이건 분명히 잘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라는 철저하게 당나라와 맞설 준비를 한 겁니다, 당나라와 맞설 준비.

예전에 영화 '황산벌' 보게 되면 김유신이 당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유신은 사대파지만 나당 전쟁을 준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신라가 당나라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 얘기는 어떻게 더 정확히 나오느냐……

제가 이게 원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로 잠깐 빠지는데 이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저 중국 서안, 오랫동안 당나라의 수도였지요. 서안에 가면, 그 서안에 왕성이 있으면 왕성에서 일직선으로 아래로 내려가. 남북으로 돼 있지요. 그걸 우리가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 갖고 북쪽은 자고 남쪽은 오야, 그래서 자오선. 왕성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거기에 종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종남산. 서안의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종남산. 종남산에 가면 최고 뛰어난 절이 지상사라는 절이에요, 지상사. 이 지상사에서 누가 공부를 했느냐? 의상대사가 공부를 했어요. 의상대사가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의상대사 사부님이 당시 화엄종의 2조, 지엄이라고 하는 그 대선사였어요. 이 지엄이 당나라 고종의 왕사였었습니다. 국사이자 왕사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엄이 당 고종을 만나고 온 거예요.

고종이 '조만간에 우리가 신라에 군대를 파병할 거다. 파병하고 나서 신라를 다 먹어서 우리 땅으로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상한테 와 가지고 '의상아, 내 제자야, 내가 조금 아까 황제 만나고 왔는데 황제가 조만간에 소정방 비롯해 가지고 60만 대군 보내서 고구려 싹 쓸어버리고 해서 신라가 통일하게 만들어 줄 건데 그 신라 우리가 다 먹어 버릴 거야. 그래서 신라 영토도 이제 당 영토로 다 합칠 거야. 그러니 너 너무 뛰어나. 니가 내 대를 이어서 화엄의 3조가 돼. 니가 이제 총 조사가 돼라' 그랬더니 의상이 '나 싫습니다'.

아니, 의상대사가 신라 사람이에요. 중국에 수많은 승려들이 있어. 그런데 그 중국의 수많은 승려들을 다 뛰어넘어서 화엄의 3조가 될 정도로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야.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특정 국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동남아 분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기서 수행하다가 우리나라 조계종 종정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태종 종정, 태고종 종정 이렇게 시키거나 아니면 서울대학교 총장 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인물이니까 의상보고, 당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선지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엄 대선사가 의상한테 화엄의 3조가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의상이 이것 거부해. 왜? 신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스승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산둥반도에 와서 배를 타고 그대로 서라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사이에 산둥반도에 처음 옆에 있던 객주의 딸이 의상을 사모해서 그 의상이 딱 가는 걸 보고서 거기서 '내가 저 스님을 지켜 주기 위해서 제발 용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 갖고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용이 돼 가지고 배를 안전하게 호위해서 서라벌까지 오게 하고 의상대사가 나중에 부석사에 갔을 때, 영주 부석사에 왔을 때, 부

석사를 창건할 때 악귀들이 막 오니까 큰 돌이 돼서 붕붕 날아다니면서 그 악귀들을 다 처단했다. 그래서 그 돌이 지금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선묘 낭자 사당도 있고.

그런 설화가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의상이 서라벌에 와 가지고 왕한테 지금 당나라가 우리 신라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공격해서 우리 신라를 합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김유신을 중심으로 했던 이 세력들이 당나라와 일대 격전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당나라하고 격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김유신 정도의 품격은 돼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국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정도의 행동을 해야 되느냐? 김유신이 정말 나이가 먹을 때까지 전장터에 나가 있었는데 당시 백제하고 싸우고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서, 김유신 집이 어디 있었느냐? 당시 삼국사기 기록을 보게 되면 첨성대, 지금 경주 가면 대릉원이 있지요? 대릉원이 있고 그 앞으로 첨성대가 있어. 첨성대 지나서 오른쪽으로 계림이 있고 그 앞으로다가 월성이 있어요. 월성이 있는데 그 첨성대 바로 뒤가 김유신 집이야.

왜 그게 나오느냐? 삼국사기 열전에 김춘추하고 축구하다가 김춘추 옷을 딱 밟아 가지고 김춘추 옷이 찢어져 가지고 딱 데리고 들어가서 옷 꿰맨다고 자기 여동생 문희한테 옷 꿰매게 하고 그러다가 그 문희가 김춘추하고 결혼하게 만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국사기 열전조에 김유신 집이 바로 첨성대 옆에 있었다라고 딱 기록돼 있거든.

그런데 김유신이 딱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임금한테 가 가지고, 김춘추—태종 무열왕—한테 가서 '폐하,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막 파발이 와 가지고, 전령이 와서 지금 백제 군사가 쳐들어왔다 딱 이야기한 거지요. 그랬더니 다들 난감해하니까 김유신이 '내가 다시 출전하겠다' 그래서 김유신이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여태까지 전쟁터 나가 있던 사람이, 그 노구가 장군들 군사들 데리고 딱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도성, 황제 성, 궁궐 바로 나오면 집 아닙니까? 첨성대 가까우니까, 집이니까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장군, 집이 여기인데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집안사람들 인사나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안에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원술 죽 나와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서 있는데 김유신이 쳐다도 안 보고 가는 겁니다. 저 장군들, 저 병사들도 아무도 집에 가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대장군이라고 어떻게 집에 가느냐…… 죽 갑니다.

죽 가서 저 경주를 벗어나고 나서 딱 군대들 휴식시킨 다음에 병사 한 명을 불러서, 전령을 불러서 우리 집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 갖고 오게 해라. 그래서 물을 딱 떠 갖고 왔어요. 뭔지도 모르고 떠 갖고 왔더니 김유신이 착 먹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집 물 맛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집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가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 최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탐하고 사적 관계를 이용해서 뭘 하지 않는 사람.

아니,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 사실 이게 백범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지요. 백범 선생님 큰 아드님 돌아가실 때, 안미생 선생 남편분 돌아가실 때 파상풍 같은 게 왔는데 페니실린 주사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이 주사약이 있었거든. 있었는데 백범 선생님이 '어떻게 이 주사약을, 저 동지들도 앓고 있는데 저 동지들한테 놔 주지 못하고 내 아들한테 놔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들한테 주사를 안 놓고 끝내 그 아들이, 결국은 큰 아드님

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님—안미생 선생님—이 자기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의 그날까지 함께 싸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 대단한 거지요.

무릇 국가 지도자들은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완전히 짬짜미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소 사대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대를 이용해서 자주적 국가 건설을 위해서 외세와 싸워서 나갈 수 있게……

자기 아들 원술이 장군의 수행이었거든. 일종의 비서인데 전쟁터에서, 지금 황해도 해주 일대에서 전쟁하다가 져 버렸어. 실수로, 대장군의 판단 잘못으로 들어왔는데 김유신이 문무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니 저들이 비록 패한 것은 마땅히 사형감이나 저 장수들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 저 장수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당나라와 싸우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딱 한 이야기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김원술만큼은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집안의 훈의를 어겼다'.

집안의 훈의가 뭐냐? 전쟁터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면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죽어서 돌아오는 건데 전쟁터에서 패했는데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내 아들만큼은 죽여야 된다. 정말 무서운 아버지이자 무서운 지도자지요.

그래서 문무왕이 제발 빌어서, 김원술 살려 줘야 된다 그래서 김원술이 살아났지만 혼자 태백산에 가서 무예 수련을 하고 마지막 전투, 지금 경기도 어디냐? 포천, 동두천, 연천 이 일대에서 있었던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당나라에 예속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당나라는 전 세계 최고 제국이야, 당시 최고 제국. 그때가 고종 때입니다, 당 고종 때. 당 고종 앞에 당 현종, 이세민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소위 말해서 정관의 치……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정치 교과서……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너무 서양 정치 교과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양 정치 교과서, 맹자도 좀 읽어 봐야 되고 정관정요도 읽어 봐야 되고 또 자치통감도 읽어 봐야 되고, 자치통감은 양이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율곡 이이가 쓴 성학집요, 동호문답 이런 책들 좀 읽어 보면서…… 정말 성학집요는 제가 읽었던 최고의 정치 교과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에 맞는 우리의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너무 서양 정치사에 매몰되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오늘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아마 안 되지요.

어쨌든 당시 당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서양의 어떤 국가들 중에 당시의 당나라를 능가할 만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나라를 신라가 이겼다 이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최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 계속합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때 당시 원나라하고 30년 항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원나라하고 30년을 싸운 나라가 없어요. 몽골하고 30년을 싸운 나라가 없습니다. 몽골이 저 고비사막 넘어 가지고 동유럽까지 점령했잖아요. 가 가지고 그냥 가면 싸그리 다, 11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여 버려, 여자들은 다 능욕하고. 피를 부르는 거야, 한 번에 전투가 다 끝나.

그런데 고려하고 무려 여덟 번을 싸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곱 번이지요. 첫 번째는 와서 협상해서 건너가고 나머지…… 여덟 번을 싸우지요. 와서 싸웠다가 장수가 죽어서 가고, 처음에 막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져 가지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몽고하고 30년을 싸운 나라는 고려밖에 없어요. 그래서 몽고가 먼저 협상하자고 합니다, 휴전하자. 그래서 당시 왕을 나오라고 해요. 강화도에 있던 고종을 나오라고 합니다. 고종이…… 말이 돼? 고려의 왕이 협상하러 저 몽고까지 가겠냐고, 턱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협상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원종이지요. 나중에 그 아들이 쿠빌라이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마국가가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리지요.

당시에 원종이 압록강을 건너서 몽고 영토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쿠빌라이하고 형하고 황제 다툼을 하던 시기에요, 황제 다툼.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쿠빌라이한테 갈까, 형한테 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쿠빌라이한테 가자……

쿠빌라이한테 갔는데, 쿠빌라이한테 갈 때 쿠빌라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 환호성을 질렀느냐? 30년 넘게 공격을 했던 이 고려가 끝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전하고 있는데, '이건 하늘이 내린 국가다. 이 하늘이 내린 국가의 황태자, 왕자가, 왕세자가 나를 찾아온 것은 하늘이 나에게 황제가 되라고 명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항복을 해 버립니다, 형이. 그래서 북경으로 들어갈 때 쿠빌라이하고 원종…… 나중에 왕이 돼서 원종이 됐지요. 원종이 같이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9개의 조항을 맺습니다. 9개의 조항을 맺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고려가 몽고로부터 예속되고 그때부터 사대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평화협정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제1조, 9개 조항 중의 제1조가 '고려의 국호를 유지한다'입니다, 고려의 국호를 유지한다. 두 번째, '고려의 문물제도를 유지한다'. 이제 세 번째부터가 1년에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고려에 엄청 손해가 아니야. 왜 그러느냐? 고려하고 원나라하고 대등한 국가가 거의 돼 가는 거예요. 왜 됐느냐? 원종이 계속해서 쿠빌라이한테 '나 당신 사위 시켜 줘' 이 이야기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위가 되는 건 '야, 우리 밑의 애야……', 제가 이 필리버스터 기간에 거친 용어 쓰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좀 써도 될까요? '너 우리 똘마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나라의 국가 제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마가 되면 황태자와 동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나라의 국가 운영과 정치에 동일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는 고려의 왕이 원나라의 국정 운영과 정치제도에 개입하는 것이 싫어서 계속해서 '아유,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은 건데 하도 요구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지요. 그로 인해서 고려가 최소한 완벽하게 속국이 되거나 아니면 힘을 잃거나 예속되거나 고려의 국가 재정이 망가지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거거든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하도 답답해서 글 하나 썼는데, 조선시대 때 1년에 네 번을 명나라·청나라에 사신을 갑니다, 네 번을. 정월초하룻날 맞춰서 가지요, 황제 생일 날 맞춰서 가지요, 황태자 생일날 맞춰서 가지요, 동

짓날 맞춰서 가지요. 동짓날하고 정월 초하루하고 한 한 달 반, 달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 달포 차이 나는데 또 가는 거야, 네 번을. 한 번 가는 데 3개월, 오는 데 3개월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조선의 무역로예요, 무역로. 그걸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무역의 핵심이 역관들인 거지요.

역관들한테는 출장비를 안 줍니다. 출장비 안 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물건 갖고 가서 물건 팔고 그걸 갖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크게, 큰 포대를 형식적으로 8개를 줘요, 8개 안에서만 하라고. 그런데 어떤 바보가 8개만 갖고 하겠습니까? 턱도 안 되는 이야기지.

옛날 '상도' 보게 되면 무슨 송상 아니면 만상, 경상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것의 총 우두머리가 역관이야. 그 역관의 또 대장, 정사가 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청나라는 '너희들 네 번 오는 거 맞이하기 너무 귀찮아'. 명나라도 마찬가지고, '귀찮아. 한 번만 와, 제발 한 번만. 왜 네 번씩 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올 때마다…… 대국은 말입니다 명나라, 청나라는 대국이기 때문에 대국은 더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조선이 가령 이만큼 갖고 왔다, 그냥 우리 요즘으로 치면 한 100억 원어치 조공품 사 갖고 갔다 그러면 얘들은 대국이기 때문에 100억 원어치 받으면 200억 원어치 주는 거예요, 200억 정도, 더 많이. 그냥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 거야.

폼은 나지. 1년에 사신이 네 번 와 갖고 황제한테 가서 알현하고 그러면 폼은 나지요. 그러나 그런 폼이 좋은 게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발, 오라고 한 거예요. 조선의 사대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치자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기득권 세력들도 자주적 의지, 실용적 의지가 있으면 그 기득권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득권들은 어떤 거냐? 하다못해 국회기록원 설립도 반대를 하는 거야. 왜? 국회기록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투명성 이것이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두려운 거.

그래서 뭔가 정보가 조작될 거다, 왜곡될 거다.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아니, 자기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거 아닙니까,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고, 우리가.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만드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단순하게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세계를 끌고 갈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지도자 하지 말아야지. 이미 우리는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평택에 가면 민세 안재홍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의 생가가 남아 있어요. 위대한 독립운동가지. 이분이 1930년대에 호를 민세로 만들 때 왜 민세로 만들었느냐? 민족에서 세계로.

이미 1930년대에 이분은 이제 우리 대한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이제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세계로 나아가고 독립하고 세계를 이끌어 가는 나라가 될 거다. 백범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화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바로 민세하고 같이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다 제거해 왔잖아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려고 했던 사람들 다 제거했지.

정여립,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조작 사건, 실제로 엄청난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정여립을 제거했지요. 실제로 정여립이 만든 대동계는 단순한 대동계가 아닙니다. 국가를 개혁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래서 반상의 잘못된 체제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그런 세상. 대동, 함께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무예 연습을 해, 함께 밥을 나누어 먹어, 함께 역할을 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왜군들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분이 왜군 진압하러 나가요. 관군들이 진압을 못 해. 그래서 오늘로 치면 진도 앞바다, 목포 일대, 호남 해안가에 왜구들이 나타나는데 국가가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국가가. 국가가 해결 못 하니까 전주에 있는 정여립 찾아가 가지고 정여립 선생이 대동계원들 이끌고 나가서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동계원들 다 모아 가지고 가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왜 대동계원들이 가서 왜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느냐? 그들이 무슨 엄청난 무예 실력이 있어서 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왜? 앞으로 이 땅에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평등국가,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진짜 참다운 민본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거센 미국의 관세 압박 이런 것에 왜 계속해서 나서서 싸우고 또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여기에 더해서 왜 협상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고 우리 후손들이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쨌든 정여립도 제거하고 백호 윤휴도 제거하고 하다못해 정약용 선생을 온갖 역사 왜곡과 기록 조작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조작되지 않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다산은 천주교 신자, 나중에 배교했지요. 그래서 본인이 동부승지를 사직하는 상소에 명확히 써 놨지 않습니까. 자기가 큰형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형수 무덤가에 가다가 강가에서, 오늘로 치면 팔당댐 앞입니다. 팔당댐 앞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형수의 동생이었던 광암 이벽한테 '천주실의'라는 책을 빌려서 보게 됐다. 광암 이벽이 소매에서 딱 책을, '천주실의'를 꺼내서 보여 준 거지요. 그 '천주실의'에 천주가 있고 거기에 어떤 개념이 있었느냐? 평등의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지.

양반, 중인, 평민, 상놈 거기에 더해서 천민이 존재하잖아요. 팔천민, 광대 백정 승려 기생 방자 신발 만드는 갖바치 다 천민들 아닙니까. 천민들은 노비보다도 못한 존재들이거든. 이런 몇 단계 신분들, 거기에 서얼까지…… 서얼도 서자와 얼자로 또 나뉘잖아요, 서자는 평민 여자 후처의 아들이고 얼자는 여자 종의 아들이고.

이렇게 복잡다단한 것들을 다 철폐하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당시 노비제도 혁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황홀했다는 것 아니야. 그것 쓰여 있어요, 황홀했다고. 그래서 황홀해서 그 뒤에 천진암에 가서 공부하고 주어사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할 수 없었다. 아니, 유교 국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물론 지금이야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당시 250년 전에 제사를 금지해? 제사 지내는 것이 효의 근본인데 어떻게 제사를 안 지냅니까. 그래서 제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이상 천주학을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천주학쟁이로 이야기를 해서 전하한테 누가 되니 내가 동부승지……', 동부승지는 승정원의 승지지요. 승지가 6명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비서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딱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동부승지가 되면 지금으로 치면 글쎄, 어느 정도일까요? 최소 정무수석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비서실장이 도승지고 수석들이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되니까…… 정무수석은 아니겠구나, 동부승지가 수석들 중에 제일 저기니까.

(「부속실장」 하는 의원 있음)

문화수석? 부속실장? 부속실장은 아니고 하여튼 수석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직을 하면서 내가 왕한테 부담이 될 거다…… 본인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당시 노론의 영수였던 심환지마저, 동부승지를 사직하는 상소가 천하의 명문이었거든.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본 적이 없다, 정말 정약용 대단하다 그랬는데 정조 죽고 나서 정약용을 천주교 신자로 몰아 가지고 유배를 보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시 재판관이 '아, 이것은 내가 봐서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4대손 정규영이라고 하는 분이 사암선생연보라고, 다산 선생이 강진에 있을 때는 다산이라는 호를 썼고 남양주 마재 거기에 있을 때는 사암이라는 호를 썼는데, 후손 정규영이 사암선생연보에 썼는데 사암선생연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당시 이조판서였던 이만수 공이 합리적 판결을 내려 줘서 죄가 없다. 이만수가 그랬거든요.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여러모로 봤는데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고로 천주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하여 무죄 방면을 해야 된다라고 당시 수렴청정하던 정순대비한테 장계를 올렸어요. 올렸더니 정순대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죄는 없으나 유배는 가야 한다. 이게 사암선생연보에 나오는 이야기야. 죄는 없으나 유배는 가야 된다, 그래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유배 갔다가 유배 10년 차에 순조가 해배 명령을 내려요. 해배 명령을 내리는데 당시 노론 기득권 세력들이 다산이 해배돼서 중앙 정계에 복귀하면 안 돼 가지고 임금이 해배 명령 내린 걸 뭉개. 요즘 표현으로 쌩까는 거지요. 뭉개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8년을 더 있게 된 겁니다, 8년을.

그래서 다산 선생이 임금이 내렸던 해배 명령, 그런데 공식 문서는 안 내려오고 임금이 다산 해배시켰다라고 하는 건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형님 만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흑산도에 있는 형도 그 소식을 듣고 '내 동생이 흑산도까지 오게 되면 너무 고생하

니 내가 내 동생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옮겨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흑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소흑산도로 오게 된 건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스승님이 가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나 동생 좀 잠깐 만나러 갔다 올 거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소흑산도를 몰래 탈출을 해요. 몰래 탈출하는데 그거 알고 와서 또 동네 사람들이 잡아가.

그래서 나중에 다산 선생이 자기 문집에 손암 선생 묘지명, 손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약전 선생의 호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중풍손, 바람이 위아래에 같이 있는 거. 손은 들어간다, 깊게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암'은 바로 바위를 말하는 거지요. 흑산도, 섬을 말하는 겁니다. 섬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호를 손암이라고 한 건데 손암 선생 묘지명에 그렇게 써 놓지요.

뭐라고 써 놓느냐? '탐관이, 잘못된 수령이 고을에 왔을 때 그 잘못된 수령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이 고을 앞에 나가서 막았다는 기록은 내가 들었지만 그러나 유배 간 사람이 딴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유배 간 사람을 다시 붙잡아서 본집으로 데려간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들어 본 적이 없다. 우리 형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바로 기득권세력들이 정약용의 해배를 막기 위해서 서류 조작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특히나 그러면 왜 그랬을까? 다산이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산 선생이 썼던 기록에 탕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탕론. 다산이 썼던 아주 핵심적인 기록 중에 전론이라고 하는 기록하고 탕론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전론이라는 기록은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토지공유제지요, 토지공유제. 토지공유제고, 옛날에는 다 마을에 살았거든요, 한 마을에. 주로 골짜기에 살았잖아요. 산골짜기에서 죽 물이 흘러내려 오고 가운데로 물이 흘러내려 오면 중간에 샘이 있고 빨래터가 있고 그 앞으로다가 집들이 좀 내려오고 마을 입구, 평지로 나가는 데 큰 느티나무가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 외가가 그렇게 된 데예요. 저기 안성시, 지금은 안성시지요. 옛날에 안성군 금광면 사심골이라고 진천 넘어가는 데 있는 덴데 우리 아버지 초임 발령지야, 거기가. 거기 대문국민학교라고 하는 데 갔다가 우리 어머니 만나 가지고 결혼해서 평택으로 오게 된 건데 거기 가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모든 마을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고을이 된 거거든요, 고을.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은근히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동네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인 게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서 공동노동을 하자는 거예요, 다산이. 이게 여전제를 확대한 건데, 공동노동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그것을 정리를 해 놨어요. 사람들이 공동노동을 해서 공동 분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을 더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인간은 술 먹고 땡땡이치고 어떤 사람은 우직하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공동 분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반발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을의 가장 원로, 어른 한 명, 그걸 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장이, 그 분은 노동을 안 해. 안 하고 뭘 하느냐?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일

지를 정리해, 일지. 이게 기록이에요, 기록. 일지를 정리해 가지고, '여기 윗집 사는 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일을 했는데 얘는 땡땡이쳤어' 이렇게 죽 정리를 해요. 1년 내의 통계를 내, 정리해서 통계를 내. 복잡하지요.

그런데 통계를 내 가지고 일한 만큼 그 해에 수확된 식량을, 여기에서 우리가 200가마가 나왔다 그러면 그 200가마를 나누는 거지요, 일한 만큼의 내용에 따라서. 저 집의 갑돌이는 더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저 집의 길동이는 덜 했으니까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국유제, 토지공유제 이것을 하자는 게 다산의 정전이에요. 그러면서도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주자는 거지요.

이것도 당시 250년 전으로 보자면 매우 파격적인데 다산이 진짜 파격적인 것은 탕론이야, 탕론. 여기서 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순(堯舜), 우탕(禹湯)' 할 때의 탕인 거지요. 중국에서 최고의 황제를 이야기할 때 요임금, 순임금 이야기하는데 요임금이 자기 아들이 좀 못났어요. 이 못난 아들이 핏줄이라고 해서 왕이 되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어서, 소문을 들은 거야. 좀 나라에 괜찮은 사람이 없겠냐 그랬더니 순이라는 사람이 그리 효자야. 그리 효자고 합리적이고 순은 특히나 생산이 되면 분배를 잘해, 분배.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당시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나올 때 그때가 요나라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삼국유사에 단군이 건국할 때가 요나라 때다라고 명백하게 기록돼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그때 당시에 국가 지도자의 최고의 모습은 분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분배.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분배를 잘하는 지도자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 분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순을 데려와서 그래서 관직에 임용시키고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고 나서 왕의 자리를 물려줘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봉건제 사회에서 자기 핏줄한테 안 물려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 순임금은 자기 자식이 또 어리바리해. 그래서 우 임금한테 물려줘. 우 임금은 또 누구한테 물려줘? 탕 임금한테 물려줘. 그래서 중국의 선양제도 이게 만들어진 거야. 지금 이 선양제도가 사실은 모택동, 그 뒤에 등소평 죽 나가요. 이게 일종의 선양제도 같은 거지. 이 선양제도가 지금 시진핑 대에 와 가지고 약간 주춤한 상태가 됐지만 그러나 다시 선양제도 시스템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선양제도 시스템이 5000년 전에 중국에서 나왔던 것을 지금 5000년 후에 중국 현대사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산은 이렇게 써 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임금이 어떻게 다 똑똑할 수 있느냐? 자기가 본 정조하고 정조 아들 순조하고 하늘과 땅이거든, 하늘과 땅. 순조는 왕으로서 능력 제로입니다. 결정을 못 해.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과 결정인데 결정을 못 하는 거야. 다 미뤄. 자기 아들한테 미루고 자기 아내한테 미루고. 아내가 그 안동 김 씨 핵심 멤버 아닙니까? 안동 김 씨 세도정치 60년을 만든 게 바로 순조의 왕비, 원순왕후였나 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교수 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머리가 그새 또 낡았네.

그런데 그 아들한테 대리청정, 효명세자한테 맡겼지요. 효명세자가 정조처럼 개혁하려고 하니까 효명세자 독살됐다는 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원왕후, 김조순의 딸」 하는 의원 있음)

순원왕후,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 김 씨.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순조가 무능한 걸 눈으로 본 다산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산이 탕론에 뭐라고 썼느냐, '국왕이 핏줄로 이어질 때 똑똑한 왕이 나올 사람이 아니면 핏줄로 내어서는 안 된다. 선양해야 된다. 그런데 선양할 사람마저 없으면 나라의 왕을 백성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 이렇게 써 놨어요. 언제 이것 최종 써 놨느냐? 1810년에 이 글을 썼습니다, 1810년에.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정치 철학자들, 개혁가들 이 사람들이 1810년에 '왕을 백성이 뽑아야 된다' 이렇게 써 놓은 사람이 있나요? 이게 바로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바로 동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2010년에 동학학보에 '정조의 자주정신과 동학의 민족정신'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정조의 자주정신, 정조는 굉장히 자주적인 국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요. 어떤 거냐? 당시 중국에 사대하는 풍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잖아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 보지요, 당시 조선의 선비들이 얼마나 사대주의가 컸는지.

도올 김용옥 교수님이 천안 목천 사람입니다. 도올 선생 집 그 바로 옆이 유관순 열사 집이에요, 생가. 유관순 열사 집에서 조금 옆에 오면 담헌 홍대용 선생 생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홍대용 천문관이 있어요. 홍대용이 천문이 대단했거든. 지구본을 만들어 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홍대용 선생이 중국에 1766년에 처음으로 북경에 사신단으로 가요. 자기 삼촌이 홍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홍억이 서장관으로 임명이 돼. 그러니까 사신단은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서장관이 있어. 정사는 자제군관이라고 해서 자식이든 형제든 5명을 데려갈 수 있고 부사는 3명을 데려갈 수 있고 서장관은 1명을 데려갈 수 있는데 홍억이 자기 아들 데려가고 싶은데 하도 조카인 홍대용이 와 가지고 '작은아버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빨리 북경 가 갖고 중국 사람들 만나 보고 싶어요' 막 이래 가지고 데려간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중국어 공부도 무지하게 한 거지요.

조선 선비들이 말입니다, 한말에 보면 4개 국어,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몽양 여운형 선생은 금릉대학 영문과 간 지 6개월 만에 영어가 통달이 돼 가지고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몽양 선생이 한 이야기가, 해방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1번, 우사 김규식. 2번, 나. 3번, 이승만. 이승만 영어 잘한다고 해 봐야 나하고 우사보다 영어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사도 프린스턴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왜 영어를 그렇게 잘했느냐? 손탁이라고 아시지요, 손탁? 손탁호텔 할 때 손탁. 손탁이 러시아 여자야. 러시아 초대 공사였던 베베르의 사촌 누나거든. 그런데 손탁이 고종을 모시고 있다가 1년 휴가를 가요. 1년 휴가를 가 갖고 당시 독일 장교 부인이 고종을 수발을 들어. 그래서 그때 이 여자가 1년 동안 있으면서 남긴 책이 있어요. '대한제국 황실 비사'라는 책이야. 이름이 '대한제국 황실 비사'야, 그 책이. 지금 번역돼서 나와 있는 게.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의 관리들이 조금 실력 있는 관리들은 4개 국어, 5개 국어를 다 한다는 거야.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다 한다는 거예요. 중국어, 일본어 다. 왜 잘하는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항상 경전을 외워 가지고, 외국 사람들 만나면 싹 다 외워 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도 어려서 전화번호 한 200개는 기본적으로 외웠잖아요. 나는 지금도 우리 처갓집

전화번호는 기억나, 연애할 때 맨날 전화해 가지고, 256-8269. 그런데 나머지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우리 가족들, 제 아내하고 제 아들 전화번호밖에 기억 못 해,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하고 딱 5명 기억…… 누나 전화번호도 기억 못 해요, 안 쓰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쓰니까 다 기억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를 판단을 못 하는 것은 맨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쨌든 당시 홍대용이 작은아버지를 꼬드겨서 중국에 갔어요. 가 갖고 거기서 만났어. 그런데 그 앞에 이미 갔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박제가가 갔다 왔잖아, 초정 박제가가 갔다 오고 그리고 유득공 갔다 오고 이덕무 갔다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맨날, 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파고다공원 앞의 거기 멤버들 아닙니까? 가난해 가지고 남산 자락부터 시작해 갖고 파고다공원 앞쪽 살았거든요. 거기가 약간 빈민가였거든요. 그래서 파고다공원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서 있어서 그게 옛날에 신대리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탑을 백탑이라고 불렀거든, 백탑. 그래서 그 일대 사람들을 백탑파라고, 자칭 백탑파야, 백탑파. 실제 당시 용어야, 백탑파. 백탑파의 멤버가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이런 당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다 백탑파지요.

백탑파 사람들이 죄다 북경 갔다 와 가지고 유리창이 어떻고 황제 도성이 어떻고 막 이러는데 자기만 못 간 것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딱 갔지. 갔는데 백탑파든 누구든 북경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성당부터 가요, 성당. 당시 사대부들이 주자주의 막 이야기하면서 가는 데는 성당이야, 성당 가 갖고 딱 보고. 그래서 단원 김홍도도 성당 갔다 온 거잖아요. 1792년에 정조가 단원을 중국에 보내. 왜 보냈느냐? 1794년 화성 축성해야 되는데 중국 성이 어떤지 스파이로 보낸 거야, 스파이로. 그래서 당시 정사였던 이병모라고 우의정이었는데 우의정한테 '당신 아들로 위장시켜서 보내자'. 거기에 화원 김홍도가 가게 되면 '화원이 왜 오느냐?' 그래서 비자 안 내 주고 돌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단원을 이병모의 아들로 보내지요. 이병모의 아들로 보내서 단원이 가 갖고 중국 성들, 산해관 관문 그리고 북경성 조양문 그려 놓고. 그것 지금 숭실대 박물관에 다 남아 있어요, 그때 그림. 그게 화성 축성할 때 딱 모델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원화성이 중국식 성제로 구성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때 성당에 딱 가서 보니까 성당 문이, 성당에 있는 벽화들이 지금까지 조선에서 보던 그림하고 전혀 달라. 음영법이 있고 원근법이 있는 거야, 성화가. 그래서 그 그림을 다 익혀 가지고 와서 최초로 그린 그림이 옛날에 수원 용주사—지금은 화성시 용주사지요—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대웅보전 후불탱화로 그린 그림이 그 그림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막 정조는 스파이로다가 김홍도도 보내고 사신단 보내서 거기서 물류 다 보내고 하는 거지요.

그때 박제가가 갔다 와서 쓴 책이 북학의라는 책 아닙니까, 북학의. 북학의 원본 책이 몇 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자 중의 한 명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보물로 지정했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 글씨 보면, 박제가 글씨. 축문을 그러니까 일종의 축하 글을 연암 박지원이 썼어요. 연암 박지원 글씨가 참 무게감 있는, 원본 한번 보면 죽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 박제가가 북학의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중국에 가니 보물이 두 개다. 하나는 깨진 기왓장이고 하나는 길거리에 버려진 소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진 기왓장과 소똥이 왜 보물이냐?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깨진 기왓장 다 버려 버리고 소똥 지저분하다고 다 거들떠도 안 보고 치우고 이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소똥을 다 모아서 말려서 겨울에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깨진 기왓장을 다 모아 갖고 바닥에 아스팔트처럼 깔아서 수레가 다닐 수 있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게 중국의 두 가지 보물이다. 그런데 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첫째도 실용, 둘째도 실용, 셋째도 실용,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당시 1790년에 무예도보통지 서문에 이덕무가 정조에게 바치는 글에 이렇게 씁니다. 정치인은, 관료들은 실용 있는 정책을 만들고…… 관료들이 실용 있는 정책 만들어야지, 정치인들 실용 있는 정책 만들고 실용 있는 정책 해야 되는 거지요. ‘관료들은 실용 있는 정책 만들고, 학자들은 실용 있는 책을 찬집하고 실용 있게 공부해서 실용 있는 책을 만들고, 상공인들은 실용 있는 상업행위를 하고, 공인들은 실용 있는 물건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실용 있는 농사를 짓고, 군인들은 실용 있는 무예를 익힌다면 어찌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 두려움이 있겠는가’.

첫째도 실용, 둘째도 실용, 셋째도 실용. 이미 230년 전에 실용을 강력하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230년 뒤에 대한민국 정치가 실용은커녕 서로 합의해서 나아가기도 모자라는데, 지금 이 엄청난 외세의 압력들이 있는데, 남북의 대결이 심한데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화합하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고 하다못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국회기록원법을 이렇게 필리버스터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홍대용이 갑니다. 가서 성당에 가요. 그 성당에서—아담 샬이 있는 그 성당입니다—아담 샬을 만납니다. 성당에 갔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그날 처음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담헌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음률의 원리를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원리를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연주해 봐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북당, 동서남북 네 개의 성당이 있었는데 북당의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저는 그 음악이 아리랑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기록이 없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록이든 아니면 등록이든 의궤든 연려실기술이든 개인 문집이든 단 한 번도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총선 전에 아주 무수히 공격을 받아 가지고 작살이 났었는데 그러나 다 100%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담헌이 거기서 자명종을 봅니다, 큰 자명종. 자명종이 얼마만 하냐면 제 몸 상체 이 정도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의 미술관 갔을 때 당시 18세기 자명종들이 쭉 전시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자명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 버리는 거야. 옛날 우리 썼던 재봉틀 지금 남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려서 할머니가 재봉틀 썼는데, 제가 이렇게 밟고 다 했는데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너무 버리는 걸 좋아해요, 버리는 걸. 다 버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기록원을 만드는 것은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버리려고. 버리지 않고 잘 보존하고 그 보존된 것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또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질서를 만들고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따가 혹시 필버 하시는 건 아니신 거지요?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행입니다. 괜히 또 필버 하시면서 반대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계속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담헌이 자명종을 다 이렇게 구입해 갖고 분해를 다 했던 거야. 천재니까 분해해서 다시 또 복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 갖고 중국의 귀족들이 서양에서 들여온 자명종 갖고 와 가지고 고장 난 것 고쳐 달라, 그래서 거기 3개월 있는 동안에 엄청 고쳤어요. 그게 또 담헌집에…… 담헌서지. 담헌은 집이라고 안 하고 담헌서라고 자기 문집을 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을병연행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사대주의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보여 주는 거예요. 담헌이 거기서 앞에 있던 이덕무부터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만났던 학자들, 한족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크지요. 이 한족학자 만났던 사람 중의 하나가 추사가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들도 다 있는 겁니다. 완원, 그래서 완당이라고 하는 호는 추사가 완원을 사모해서 완당이라고 호를 지은 거고 또 추사도 중국 스승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추사도 기본적으로 사대주의자야. 왜냐하면 자기가 완당과 추사를 다 중국 사람을 써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사가 마지막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문화를, 중국을 뛰어넘어 버린 거야. 그래서 추사가 위대한 겁니다. 추사가 처음에는 사대주의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러다가 중국 청나라의 고증학을 공부하고 나서 북한산에 올라가서 저 순수비가 당시 무학대사가 세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끼를 뜯어 내고 딱 보니까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 글자가 뭔 글자인지 너무 이끼가 많아서 심하니까 다시 내려가 가지고 탁본기술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끼 다 떼고 탁본해 갖고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무학대사가 한양도성 정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흥왕이 신라의 영토가 북한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 놓은 영토비였던 거지. 그것을 순수비라고 한 것 아닙니까, 순수비.

순수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자신의 영토를 이렇게 찾아가서 세우는 것을 순수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용어지, 순수가. 지금 대통령 초도 순시 이렇게 하잖아요. 순시는 제후의 용어이고 순수는 황제의 용어야. 그러니까 박통 시절에 그 순시를 제후의 용어로 쓴 거예요. 그때도 대통령 초도 순수, 이렇게 처음 나가서 순수하셨다고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용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일제 때 썼던 그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역사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당시 담헌이 딱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날 딱 찾아갑니다. 헤어지기 전날 딱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야기 꺼냅니다. '야, 너네들 한족인데 너네 한족들하고 지금 저 청나라 재네들하고 쪽수가 9 대 1이야, 9 대 1. 너네 한족이 9고 저 오랑캐 저 자식들 1밖에 안 돼. 그런데 저것들 왜 못 제끼는 거야. 저것들 다 날리고 바로 다시 명나라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를 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깜짝 놀라더니 '아니, 우리 그럴 생각 별로 없는데? 쟤네들 우리한테 잘해 주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야, 그런 말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다가 홍대용이 갑자기 펑펑 울어요, 펑펑. 제가 이 대목에서 열이 받은 겁니다. 펑펑 울더니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는 너네 한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고, 머리 길러서 상투 틀고 있고'……

옛날 중국 애들 보면 머리 기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무협영화 이런 거 보면 한족 애들 머리 막 기르고 다니고 있잖아. 그러면서 칼 쓸 때 촤악 하면 머리 날리고. 다 뻥입니다, 뻥. 칼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칼 하나가 눈이라도 탁 하면 그사이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꽁꽁꽁꽁 묶어 가지고 절대로 눈 쪽으로 머리카락 한 올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전쟁 무사들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하여튼 드라마고 영화니까 폼 잡는 거지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머리 계속 기르고 있는데 왜 니들 새끼들아 오랑캐처럼 변발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니들 전통을 지켜 주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니들 지금 옷 봐, 옷. 옷을 단추를 가운데 매고 있잖아. 우리는 너네들의 전통을 지켜 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옷고름을 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고 있는 한복 두루마기 옷고름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중국과 우리의 예법이거든. 이거를 지키고 있는데 왜 너네는 가운데 단추를 그러고 매고 있냐' 그랬더니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런데 미안해', '왜 미안하냐? 니들이 우리한테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뭐…… 미안해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야, 미안해. 우리 백성들이 무식해서 너무 미안해. 우리 백성들이 중국에 사대하기 위해서 문자를 지금 너희들하고 똑같이 한문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말을, 중국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나는 너네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국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은 중국어를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제가 을병연행록을 읽다가 이 대목을 읽을 때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실학자가 홍대용이었는데 홍대용이 이렇게 사대주의자였나.

당시 조선 선비들은 말이지요 조국이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야. 그 이전에 요임금·순임금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나라·송나라·명나라, 이게 자기들의 모국인 거야, 모국. 자기는 모국어를 쓰는 거야. 홍대용은 모국어를 쓰는 건데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은 무식해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모습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주자 존숭주의, 주자 도통주의 이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아니야, 조선 선비들의 시각으로 공자·맹자의 학문을 재해석하고 조선 선비들이 새롭게 학문의 영역을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백호 윤휴가 더 죽게 됐느냐? 좀 앞으로 올라가면 분서갱유, 책을 불 지르고 유학자들, 선비들 갱, 땅에다 묻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했어요? 진시황이 한 거지요. 공자가 분서갱유를 예견을 했어요, 분서갱유를. 예견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 담장에

다가 그 사이에다가 죽간을 숨겨 놓은 거야, 죽간을. 숨겨 놨지, 숨겨 놓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쨌든 책들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 가는데 계속해서 필사해 가지고 옮겨 가고 필사해 가지고 옮겨 가고 하다 보니까 공자가 처음에 했던 원문과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호 윤휴가 보니까 중용이 아무리 봐도 주자가 정리한, 공자가 썼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자가 다시 정리하거든. 주자가 한 가장 위대한 일 중의 하나가 사서를 정리한 거예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네 가지를, 이 네 책, 이 네 경전을 주자가 다시 재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순서를 다시 만들어 놓은 거야, 순서를. 1장 2장 3장 4장 4장 5장 6장 이게 흐트러져 있던 것을, 주자 전에는 다 흐트러져 있던 거예요. 흐트러져 있던 것을 정리를 한 거예요, 주자가.

주자가 정리를 했는데, 윤휴가 보니까 중용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문장의 맥이 안 맞아. 그래서 주자의 중용을 다시 윤휴가 재정립을 했어요. 우암 송시열이 윤휴가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선비가, 자기 친구 윤선거가 중용을 읽고 있는데 주자가 정리한 중용의 순서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왜 다르냐 그랬더니 윤휴가 다시 정립한 거라는 거예요, 윤휴가. 우암 송시열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말도 안 돼, 주자가 정립한 것을 어떻게 일개 조선의 선비 따위가 정립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 돼, 이것 보는 놈들 다 사문난적이야', 이렇게 된 거고.

그 뒤에 윤휴가 숙종이 등극하고 나서 당시 병조판서 유혁연하고 함께 어떤 것을 준비를 했느냐, 바로 북벌을 준비합니다. 북벌의 핵심 내용은 이거지요. 만주 지역 텅텅 비어 있다. 실제로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텅텅? 백두산 이쪽부터 시작해서 누르하치가 백두산 위쪽의 건주 지역의 여진족에서 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신성시해서 봉금 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텅텅 비어 있거든. 그래서 텅텅 빈 옛 고터를 되찾자. 쳐들어가자.

쳐들어가는데, 우리 조선은 활이 능하고, 활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기절을 하지요. 우리가 지금 국궁이라고 하지만 활이 딱 나와서 탁 맞춰 버리잖아요. 정조 같은 사람 제가 옛날에 정조 리더십 코드 5049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그 책에 정조 활 쏘기 이야기했는데 정조가 하도 활을 잘 쏴서 과녁으로 쏘다가 소포 작은 것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주걱을 놓습니다, 주걱을. 그래서 145m 거리에서 딱 쏴 가지고 주걱을 맞춰요. 이것은 지금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도 못 하는 거예요, 145m에서 주걱 딱 맞추는 것. 그럴 정도로 왕도 활을 잘 쏘고 나머지 사람들도 활을 잘 쏩니다.

조선의 활은 당시 200m 이상 나가고 우리가 만든 석궁, 석궁은 1㎞ 이상 나가요, 1㎞ 이상. 그래서 이것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활 만들기 명장 구진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1㎞ 이상 날아가 가지고 당나라 황제가 구진천을 납치해 오게 해 가지고 활 만들게 계속하는데 이 사람이 끝내 활 안 만들고 혀를 깨물고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애국자들이 옛날에 많았던 거지요.

그만큼 활을 잘 쏘고 그리고 우리가 화포가 발달돼 있다, 화포.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에서 화포 문화가 제일 발달된 나라가 당시 조선이었거든. 이미 아시겠지만 신라 시대 때 신기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었잖아요. 중국의 화약이 특급 비밀이었거든. 화약을 통해서 대포를 만들었는데 중국이 이걸 절대 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성의 앞바다, 예성강 맨

끝에 가면 벽란도라고, 전 세계 최고 무역기지였는데 벽란도 가서 죽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화약을 만들 줄 아는 상인이 벽란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꼬드겨서 일주일을 주지육림의 세계로 모셔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화약 만드는 기술을 배워내지요. 뇌물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결국 그 기술을 가지고 최무선이 고려 말에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화약과 대포를 만들고 그 뒤에 최무선의 아들이 세종 대에 맹장으로 활약을 하지요. 그래서 당시에 신기전, 로켓 만들어 냅니다. 전 세계에서 로켓을 만든 1호 국가가 조선이에요,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미국이 여태까지 사거리 제한을 뒀는데 사거리 풀어줬으니까 우리가 머지않아,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기술은 이미 다 돼 있고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봐서는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미 조선시대 때 다 만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가 가지고 대출받을 때 당시 100원짜리 지폐 하나 딱 갖고 간 것 아닙니까. 갖고 가 갖고 '봐라. 이미 1592년에'……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 12일 날 거북선 완공해 갖고 시범운행 했거든. 제가 2000년도에 이순신 장군 전기를 써서 아직도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딱 갖고 가서 '우리가 이미 6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철로다가 배를 만든 나라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배 만들게 돈을 지원해 줘라'라고 해서 현대미포 조선소, 옥포 조선소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것 한 30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30년밖에 안 된 이 조선업이 과거에 했던 걸 그대로 하니까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는 거고, 조만간에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인공위성 발사체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 우주항공을 선두적으로 나갈 거다 확신합니다.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면 정조가 당시에, 이런 사대주의 시절에…… 제가 정조의 민족운동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좀 돌아갔는데, 이런 사대주의 시절에, 오로지 명·청 그 앞으로 가서 당·한, 그냥 오로지 중국이 모국이고 하던 시절에 정조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 바로 단군을 모시자.

평양에 단군릉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1993년에 단군릉 대대적으로 발견됐다고 막 나왔지요? 정확하게 1993년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일성 주석이 단군릉이 발견됐다 막 이야기했는데, 이 단군릉은 언제 발견된 거냐? 영조 때 발견이 됩니다, 영조 때. 그래서 영조가 친필로 그 앞에 단군릉이라고 비석을 세워 놔요. 그러다가 그 단군릉을 완전히 정비한 게 정조입니다.

정조가 단군릉을 정비하면서 단군에 대한 제사를 국가의례로 만듭니다. 정조 때 처음으로 단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우리 민족 시조에 대해서. 그리고 박혁거세, 혁거세에 대한 사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민족 시조로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김수로왕, 민족 시조로 제사를 지내게 하지요. 그러니까 단군, 신라 그리고 주몽……

동명왕릉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원래 동명왕릉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오녀산성이지, 환인. 지금 중국 환인의 오녀산성인데, 오녀산성에서 수도를 집안으로 옮기지요. 유리왕 때 집안으로 옮겼다가 다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당시 민족 시조에 대해서만큼은 오녀산성에서 집안으

로—첫 왕이니까—집안에서 다시 평양으로, 평양으로 옮겨서 동명성왕릉이 만들어지는데 동명성왕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동명성왕에 치제를 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백제 창건주 온조에 대해서 사당이 없는 거예요, 온조에 대해서. 그래서 정조가 온조에 대한 사당을 만들게 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 거냐? 남한산성 아닙니까, 남한산성. 남한산성 주차장에서 들어가다가 왼편으로 죽 올라가면 남한산성의 동문 쪽으로…… 아니, 북문으로 갑니다. 북문으로 가다가 동문으로 올라가는 길로 나가게 되는데 그 사이 왼쪽으로 남한행궁에서 오른쪽이지, 남한행궁에서 오른쪽이고 동문에서는 왼쪽으로 나가는 길로 해서 숭렬전이라고 온조 사당이 있는데 그 온조 사당을 정조가 직접 만들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족 시조를 추숭하고 재정립하는 것들.

여기에 더해서 이순신 장군 치제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 치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인물인데 이순신 장군은 선조 이후에 잊혀진 인물입니다. 왜? 국가가 의도적으로……

저 다음 박충권 의원님 하시는 건가요?

언제까지 해야……

(「계속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사라진 인물이야. 사라진 인물인데 정조 입장에서는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항일의 위대한 인물 이순신 장군을 복권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충무공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게 되면 1급 포상,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1급 공신으로 추증을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인물이에요. 정조가 충무공을 다시 복권시키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당시 2명한테 충무공의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하게 합니다. 1명이 유득공이라고 하는 당시 규장각 검서관, 실무적인 일을 다 하는 거지요. 1명이 윤…… 아, 정조가 아주 총애하는 규장각 학자가 있었는데, 초계문신이었는데 두 사람한테 하게 합니다. 조금 이따가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유득공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정조한테 여쭙습니다. '전하, 충무공이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임진년에 쓰고 그 뒤에 쭉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이렇게 해서 자축인묘진사, 그러면 임진 다음 계사지요. 그래서 계사장초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일기를 죽 써서 따로따로 묶음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조가 '그래? 그러면 그 일기를 묶어서 이름을 붙여라. 난중에 썼으니 난중일기로 해라'라고 정조가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고요 정조가 난중일기로 이름을 붙여 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분들이 많이 모르는 이야기기는 한데, 이렇게 이순신 같은 사람을 현양하는 정조와 같은 사람들이게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사람들의 정신이 어디로 이어진 거냐? 바로 동학으로 이어졌다라고 제가 그 논문에 쓴 겁니다. 동학은 아까 제가 김용만 의원님 계실 때 김용만 의원님의 바로 증조할아버님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16세에 동학의 접주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동학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외세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서학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당시 서학은 실제 서기론, 서양의 기계문

명론, 서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자고 하는 서기론과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이자는 서교론이었는데 실제 서기론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서기론은. 서양의 기술을 대폭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정조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박제가가 청나라 가서 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 황실의 흠천감이라는 데서 고위직으로 임명이 돼서 거기서 서양의 과학·기계 문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회 소속이었던 거예요. 예수회 소속이었는데 예수회에서 불러들이는 거야. 왜 예수회에서 불러들이느냐? 로마교황청하고 예수회하고 일대 대결에서 예수회가 패배를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회는, 당시 십자군전쟁 이후에 천주교가 몰락을 했어. 많은 세계인으로부터 천주교가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다시 포교하기 위해서 동방 전교를 해야 된다, 동방 전교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인정하면 그 나라의 어떠한 문화도 받아들여도 괜찮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당시 서양 선교사의 천주교, 서교론이 조선까지 왔을 때 조선에서 어땠습니까? 다 제사를 인정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1790년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주교를 만나기 전까지 조선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다 제사를 지냈거든, 다 인정하는 거였어. 왜? 예수회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회가 청나라에도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스며들고 그 서양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건축 기술, 토목 기술, 천문 능력 이런 것들을 청나라에 엄청나게 보급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강희제 시절, 옹정제 시절, 건륭제 시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강건성세의 시절이 중국 오천 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가 됐던 겁니다, 그 강건성세 시기가.

그래서 박제가는 깜짝 놀라서 '저 청나라의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서서히 청을 떠나. 그러다가 '저 사람들이 조선에 오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서 정조가 1786년에, 왕이 된 지 정확히 10년 되는 해입니다. 10년 되는 해에 조정에 있는 모든 관료들 그리고 대소 신료들, 사대부들한테 특별 하교를 내립니다. 어떤 하교냐, '나에 대한 온갖 비난을 해도 좋다, 온갖 비난을. 그러나 국가에 대한 개혁안이 있으면 제출해 다오'. 그 안에 정조 국왕 뭐 어쩌고저쩌고, 당신 이래서 문제고 탕평 한다 그러더니 제대로 못 하고 왜 규장각 문신들만 끼고 돌고 똑똑한 젊은 애들 정약용이니 뭐 이놈들만 데리고 놀고 왜 이러느냐, 이런 것 다 좋다. 그러나 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내용만 제출해 줘라.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도 이런 것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서 정말 시골의 촌부부터 시작해서 원로들에 이르기까지, 며칠 전에 정세현 장관님 발언 '지금 동맹파가 장악하고 있다, 동맹파 장악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즌2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박제가가 정조한테 했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느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전하가 용기가 없다, 용기가. 서양의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면 지금 천주학 문제……'. 그러니까 당시 천주교 신자가 나타난 건 요즘으로 치면 빨갱이, 이건 친북주의자·종북주의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들, 기존 기득권들, 개혁을 추구하는 정조

와 실학 세력들, 실용 세력들, 이 세력들을 공격하는 최대의 무기가 '저것들 다 천주교 신자들 아니냐? 저것들 다 서학 믿는 놈들이다. 그러니 저것들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이 논리. 사실은 이 논리에 정조가 1799년에 당한 거야. 1799년에 하도 강력하게 기득권 세력들이, 정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주교 신자들 내몰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정조가 눈물을 머금고 다산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측근들, 자기 핵심 세력들을 다 관직에서 뺐어요. 이게 정조의 최대 실수예요, 최대 실수. 자신과 함께 개혁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 바깥에서 온갖 공격을 다 해도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그 풍파를 이겨 냈어야 되는데 너무 강고한 공격이 있다고 해서 잠깐 뒤로 좀 뺐다가 나가자, 잠깐 뒤로 빠진 사이에 죽어 버린 거예요. 개혁이 다 물거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도정치 60년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 박제가가 정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전하, 온갖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전하에 대해서 서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비난을 저들이 한다 하더라도 서양 선교사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조선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전하, 그럴 용기가 없다. 내가 보니까 용기가 없다', 너무 신랄한 이야기였지요. 정조가 끝내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비답, 답변은 뭐였느냐?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개혁의 때가 오면 그 개혁의 때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 이따 할 거야'. 조금 이따가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하지 않으면 개혁은 할 수가 없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또 양보도 좀 하고, 그러나 개혁을 하는 대원칙은 가야 할 건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합의하고 협의하고 내 것 좀 내주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팔 하나 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그런데 그 용기를 현실의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나 다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혁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조가 그때 1786년 박제가가 했던 서양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지 못해서 아쉽게도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개혁 세력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묘청부터 시작해서 자주파, 이 자주파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 강고한 기득권들한테 막혀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강고한 세력들 그걸 막아 내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냐? 거꾸로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그것은 바로 기록을 투명하게 만들고 기록을 철저하게 하는 일이다, 기록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기록이거든요. 기록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반개혁 세력이고 누가 개혁 세력이고 누가 실용주의자인지 이게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이 기록의 대부분은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각종 의궤,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위대한 기록을 남겨 놓은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10월 달에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하고 우리 당의 서영석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저, 넷이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습니다, 의원외교로. 우리 의장님께서 보내 주셔 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몽골도 가고. 카자흐스탄 딱 1박 2일, 밤에 도착하고 그다

음 날 낮에 고려인들 만나고 고려인들하고 맥주 한잔 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아쉽습니다. 11월 달에 다시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만났는데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2000만 명 중에 12만 명, 0.2%가 채 안 됩니다. 2000만 명 중에 12만 명이니까 0.1~0.2%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카자흐스탄 전체 1위부터 50위까지의 부유층 중에 12명이 있어요, 12명이. 1등도 고려인이야, 1등도.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합작해서 하고 있는데, 대단하지. 1937년에 강제 이주된 분들이에요. 오다가 반이 동사해서 기차 안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 위대한 홍범도 장군도 거기서 카자흐스탄까지 와 갖고 크즐오르다에서 영화관 앞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한 대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지역에 와 가지고 생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37년에 이주한 분들이 2025년,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국회의장도 나왔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재벌 1위부터 50위 안에 1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재벌 8위 하시는 분하고 만났습니다. 신 모 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밥을 먹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고려인들 한 스무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립 카자흐스탄 알마티 도서관에 자기 선조들이 갖고 온 책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책이. 깜짝 놀랐습니다. 책이 그렇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한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도 제가 명색이 역사 공부하고 한문 공부를 해서 책 보면 어떤 책인지 다 안다. 이거 혹시 목록은 있느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목록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영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영사한테 '아니,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이거 조사 안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강제 이주당하면서 책을 갖고 온 거야, 애들 공부시키려고 책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책만 갖고 온 게 아니라 활자를 갖고 왔답니다, 활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문 만들던 그 활자를 갖고 온 거야. 먹을 것도 없는데, 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걸 제대로 갖고 올 분량도 안 되는데 활자하고 책을 갖고 온 거예요, 이 고려인들이, 우리 선조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착하고 나서 어렵게 농사지으면서 아이들 그 책을 갖고 공부를 시키고 활자로다가 다시 어렵게어렵게 조판해 가지고 신문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야. 지식을 공유하는 거야, 지식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바로 민주사회로 나아가고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그 어떤 권력자들도 절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민주시민을 더 많이 양성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게 되면 우리 정치인들이 더 투명하게, 더 정직하게,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왜 우리 고려인들이 이렇게 100년도 안 돼서 0.2%도 안 되는 이분들이 카자흐스탄을 움직이고 카자흐스탄의 중심 인물이 됐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기록 때문에, 기록. 아무도 그 문집, 한자 읽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역

사 공부한 지 30년이 넘었고 한문 공부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김언종 국립 고전번역원장님하고 밥 먹으면서 '원장님, 국감 끝나면 국립 고전번역원에서 한 세 분 가시고 저하고 해서……', 우리 경비는 없으니까 우리 의원실 예산하고 고전번역원 예산하고 해서 한 일주일 갔다 와야 되는데 혹시 의장님께서 좀 지원해 주시면 제가 카자흐스탄 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그 만난 사람이 신안드레이예요?

○김준혁 의원 예, 신안드레이. 그분 만나고 왔지요.

우리가 지금도 이런 기록이 중요한데 옛날 조선왕조실록 보십시오. 그 조선왕조실록이 모든 것들을 기록합니다. 임금이 갈 때 사관 둘이 늘 쫓아다녀요. 1명은 임금의 말을 기록하고 1명은 임금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허투루 할 수 없어. 사관이 없이는 절대 독대가 불가능해. 왜? 사관 없이 둘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이게 조선의 법도예요. 그걸 군주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하는 행동……

하다못해 연산군도 광해군도 사관 없이 독대하지 못했어요. 다른 건 다 신하들이 꾹 참고, 온갖 패악질을 하고 패륜을 저질러도 다 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기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관 없이 국왕이 누구를 만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패륜아 군주마저도 국가의 기록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그리고 조정에서 하는 모든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세밀하게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것, 승정원에서 회의하지요? 그것도 역시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 기록된 내용들 이것들이 승정원일기로, 이것도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세계기록유산, 정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고종까지 갔던 일성록, 일성록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보다 5배는 방대합니다. 그것은 임금이, 실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록청에서 사관들이 만들었던 사초를 다시 정리해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또 요약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사선택을 하는데 일성록은 그런 것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임금이 그냥 이야기한 것까지 다, 마지막 임금의 잠자리만 제외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해가 뜨는 평명 그리고 정오 그리고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에 임금이 신하하고 야대하는 것까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신하들 만나서 세미나하는 것 조강, 낮에 밥 먹고 하는 것 주강, 저녁 먹고 하는 석강, 늦은 밤에 하는 야대, 하루에 공부를 네 번이나 해. 세미나, 토론을 네 번이나 해. 이렇게 조선의 군주가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승정원일기, 일성록에서 꼼꼼히 기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 못 들으셨겠지만 제가 수원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그때 만들었던 모든 기록들을 다 폐기하고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도시계획이 어떻게 정립이 됐는지 알 길이 없어. 30만 도시에서 126만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그사이에 구도심이 있고 인계동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정자·천천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영통지구가 만들어지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광교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가 쭉쭉쭉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에 영통 광교신도시 만드는 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정자·천천지구, 그 앞의 인계지구 이런 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없지. 답답하지.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전혀 달라. 궁궐을 건축하면 궁궐 건축 영건도감이라고 경복궁을 새로 짓는다든가 창덕궁을 수리한가든가 지금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경운궁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설명, 도설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림은 천연색 컬러로 해 가지고 당시 모습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고 설명도 제대로 딱 해 놓고 그 안에는 어떤 장신구가 들어갔는지 어떤 못이 들어갔는지 어떤 망치를 썼는지 어떤 대패를 썼는지 어떤 톱을 썼는지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성성역의궤,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수원에 만들었던 4600보, 오늘로 치면 5.74㎞, 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룡문, 4개 성문과 그리고 방화수류정을 비롯한 4개의 각루 그리고 화성행궁, 582칸의 그 거대한 화성행궁까지, 그것을 만들어 내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들 상세하게 다 만들어졌어요.

한국전쟁 기간에 다 파괴됐거든. 싸그리, 거의 대부분이. 장안문 파괴됐지요. 그리고 창룡문 파괴됐지요. 장안문은 북쪽에 있는 문이라 북문이라고 하고 창룡문은 동쪽에 있는 동문이라고 하고 화서문은 서쪽에 있다고 서문이라고 하고 팔달문은 남쪽에 있다고 남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남문은 남아 있고 서문은 서 있고 북문은 부서지고 동문은 도망갔다’ 이게 수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한국전쟁 기간에 다 파괴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 파괴된 것을 어떻게 복원했느냐?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수원화성을 복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화성성역의궤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화성성역의궤대로 장안문은 이렇게 지어졌고 창룡문은 이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서북각루는 이렇게 지어졌고 동남각루는 이렇게 지어졌고, 화성행궁도 도면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이 위대한 기록, 정말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이 전율스러운 기록들, 선조들은 이런 기록들을 남겨 놓는 거예요.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에 혜경궁 홍 씨 모시고 정조가 수원에 행차를 할 때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중간에 한강에 배다리를 놔. 다산 정약용한테 배다리 설계를 지시하고, 그 배다리를 처음에 1789년에 사도세자 묘소를 수원으로 옮길 때 그때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해마다 배다리를 설치해. 한 달 동안 배다리를 설치해요. 한 달 동안 배다리를 설치해서 옮기기, 왔다 갔다, 행차 일주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물류 이동, 대이동으로, 그래서 30일 중에 7일을 빼고 나머지 기간, 그래서 23일, 20일을 갖다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한양에서 지방으로 수레를 이용해서 한강을 건너서 전국으로 상업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첫날 내려갈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 음식의 레시피가, 흑임자죽을 먹었을 때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어떤 것을 넣어서 먹었다. 이게 바로 K-푸드의 원형이야. 전 세계에서 한류를 시작할 때 우리 음식, 한식이 서양에 나갈 때 그때 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와 있는 그 음식 레시피, 우리말로 음식의 여러 내용들 성분들을 갖다 하고 그것을 이용한 음식을 가지고 나아가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했던 다양한 군사훈련들, 성 위에서 정조의 지시로 내렸던 군사훈련, 화포 쏘고 신기전 날리고, 거기에 또 K-무용

이라고 이야기하는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와 있는 봉수당 회갑 진찬연 거기의 일곱 가지 무용들, 선유락, 배를 하나 놓고 33명의 무용수들이 둥글둥글둥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 이 선유락은 백성들 무용이야, 민가에서 사용하는 무용이야. 민가에서 사용한 무용을 궁중무용으로 채택을 해. 파격적이지요. 그 안에서 전 세계 최초로 여성을 우대하는 거예요. 원행을묘정리의궤 안에 보게 되면 혜경궁 홍 씨 회갑 진찬연에 그 안에, 봉수당 안에 왕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혜경궁 홍 씨—어머니—하고 어머니 여자 친척들—올케, 시누, 여동생—이 사람들이 앉아 있고 왕은 그 바깥에, 돌계단 옆의 월대에 앉아 있어요. 왕이 더 중요한 곳에 가 있지 않고 아래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따지고 보면 왕의 신하들이에요. 당연하지요, 왕의 신하들이에요. 혜경궁 홍 씨마저도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호적상, 족보상으로 친모가 아니라 작은엄마로 돼 있거든요. 친모지만 작은어머니. 왜? 정조는 큰아버지 효장세자를 계승해서, 효장세자가 진종이라는 왕이 됐고 정조는 그 진종을 계승한 왕이었거든.

그리고 나머지 친척들 다 왕의 신하들이지. 그러나 여성을 우대하는 거예요. 여성과 합연을 해. 조선시대 국왕은, 왕과 신하들이 하면 남자들의 잔치 그리고 왕비하고 정경부인, 궁녀, 공주들이 하는 건 여자들의 잔치. 왕과 남자 관료들이 하는 건 외연, 여자들 왕비하고 대비하고 함께하는 잔치는 내연.

남자들 잔치는 궁중무용수로 10살 미만의 어린 무동들이 하는 겁니다. 술과 음식은 다 내시들이 날라. 우리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게 되면 왕하고 신하들하고 잔치하면 죄다 궁녀들이 막 나르고, 다 거짓말이에요. 조선시대에 그런 것 없습니다.

여자들끼리 잔치할 때 다 장막 쳐 놓고 맹인 악공이 연주하고, 만약에 맹인 악공이 없다 그러면 장막 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게 악공들이 연주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원내대표단 밥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갔다가 대통령실 용산 관저 거기 밥 먹는 데, 영빈관 하기에는 좀 작은 데 거기를 딱 갔더니 병풍에, 깜짝 놀랐어요, 왕비 내연 병풍이 걸려 있어 가지고. 보통 그런 데 다 왕의 진찬연 병풍도가 걸려 있는데 왕비 진찬연 병풍도가 걸려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때 걸어 놓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야, 김건희 여사님이 세긴 세구나'.

그래서 제가 밥 먹다 한마디하라 그래서 '대통령님, 저게 왕비 진연 병풍도입니다' 그랬더니 뭐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것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00명 중에 저 딱 하나가 그런 것 볼 줄 알겠지요, 제가 문화재위원도 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바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경기도 문화재위원 했지.

(「그게 아니고 바꿨냐고」 하는 의원 있음)

바꿨냐고? 그거는 제가 모르지요, 제가 관저를 다시 가 본 적이 없으니까.

원행을묘정리의궤 안에 보게 되면 조선 역사상 최초로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잔치합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정조의 여성 친척들, 혜경궁의 친척들, 자기의 여동생들도 같이 있고, 청선공주·청연공주도 있고 그리고 자기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 당고모할머니, 조엄의 부인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고구마 일본에서 갖고 온 조엄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그 조엄의 부인이 혜경궁 홍 씨의 고모거든. 그렇게 있고.

여기에 의빈 척신이라고 해서 부마부터 시작해서 왕의 친척 남자들, 고위 관료들 한데 있고 여성 무용수들이 춤을 춰요, 첫 번째 무용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무용까지.

조선 역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우러진, 이건 혁명이지, 혁명. 조선 역사에서 어디 남녀칠세부동석인데 왕의 어머니 회갑잔치에 남녀가 함께 춤을 추고 어우러지고, 이런 파격적인 역사가 원행을묘정리의궤라고 하는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가지고 한류문화를 새로 만들어 내고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선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남과 여가 하나로 모이고 평등적 무대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남녀 차별, 민주주의 아니지. 신분 차별, 민주주의 아니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고.

서울의 기녀 13명, 16명이 내려오고 수원의 기녀 17명,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서울 기녀 다 데리고 내려올 수 없어서, 출장비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수원에 있는 기녀들하고 같이해서 그 전날 함께 합동 리허설 해 갖고 입 맞춰 갖고 무용 공연하고. 이야, 수도권과 지방이 어우러져.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어우러지는 최초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야,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의장 우원식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김준혁 의원 죄송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이 지역균형발전이 1795년 윤 2월에 수원에서 개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새롭게 연구하고. 왜? 이걸 지금까지 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제 자랑이라고 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마는 대학원에서 정조 전공하기 시작하면서 참 궁여지책으로 수원시 학예연구사 들어갔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무예도보통지,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습니다. 정조가 1790년에 만든 무예서인데 이 무예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관찬 무예서야. 여기에 동작 하나하나, 이 자세, 권법의 이 자세, 이게 석굴암에 있는 금강역사 자세입니다. 이게 태권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무예도보통지를 지정할 때 태권도의 원류가 되는 무예를 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라 화랑 황창랑이 썼던 본국검 그리고 중국에서 인정하는 조선세법. 칼을 뽑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칼을 뽑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칼을 갖고 있다가 딱 출검과 동시에 적의 목을 베는, 검법 자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출검이 곧 공격이야. 중국 애들은 출검하고 나서 시작하자 이런 거고 우리는 그냥 바로 스피드로 속도전으로, 이런 내용이 다 무예도보통지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제가 차분히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24기 공연단을 만들고 지금 유럽에 가서 공연하고 미주에서 가서 공연하고, 우리의 전통무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무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무예가 있었기 때문에 백호 윤휴가 청나라 진격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유라고 하는 장군이 북정일기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는데 북정일기가 뭐냐? 제2차 아라사 정벌,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청나라 흑룡강 일대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청나라 정

부가 조선에다가 조총 부대를 보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선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선정벌. 1차 나선정벌이 있고 2차 나선정벌이 있는데 2차 나선정벌의 주인공이 박유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가 가지고 러시아 군대 다 쓸어버렸거든.

그래서 당시 5000정의 총을 노획을 합니다. 딱 한 정 갖고 옵니다, 청나라가 못 갖고 가게 해서. 그래서 그 안에 공이부터 시작해서 다 뽑아 가지고 보냈지요. 보냈지만 그걸 갖고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맹파들, 동맹파들 때문에 그 조총을 분해해서 서양의 새로운 총, 우리가 갖고 있었던 화승총이 아니라 그게 수석식 총이라는 거거든요. 수석식 총은 어떤 거냐? 차돌, 딱 치면 차돌에서 튕겨 가지고 불꽃이 튀어서 화약으로 해 갖고 그대로 쏘게 하는, 그래서 라이플 이전에 나오는 그 전 단계 총인데 이 수석식 총을 노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맹파들 때문에 연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런 세상에서 동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서양 세력들과 계속 연대하지 않고, 우리가 저 서양 세력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면 특히나 일본 외세들이 오게 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주적 존립이 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척양척왜 보국안민, 물론 격하긴 하지. 그러나 당시에 백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 기득권을 다 혁파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만석보라고 하는 그 보, 저수지의 물세를 받는 물세 투쟁의 단계를 넘어서서 신분 해방……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폐정개혁안 14조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신분 해방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모든 노비를 혁파한다, 여성의 재가 금지를 허용한다 아닙니까. 여성들이 재가를 금지하는 차별을 받고 노비, 천출들 차별을 받고 이런 것들을 없애고 탐관오리들 징토하고 공정한 세금 걷고 그리고 외세에 협력한 자들 처단하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외세에 협력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에 기생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신분 차별하는 사람 많고. 지금도 못된 탐관과 오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산이 쓴 목민심서 그건 내다 버려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민심서가 뭐가 그리 대단해?'

다산이 쓴 목민심서에 해관조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짊어지고 간 바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대로 갖고 나와라. 더 이상 어떤 것도 갖고 오지 마라'.

목민심서 서문이 무섭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수령이 되고자 하는 자, 본인이 수령이 되고 싶다고 수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백성들이 당신이 수령이 돼서 이 지역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할 때 수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수령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더 얻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또 많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 임진왜란을 거치고 병자호란을 거치고 그사이에 수많은

민란들을 거치지요. 1862년부터 시작했던 수많은 민란과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통한 그 엄청난 역사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화들.

연산군이 자기 할머니를 죽이고 자기 동생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또 광해군도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어쨌든 대비니까, 자기 친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수많은 신하들을 선비들을 사대부들을 사화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죽이지요.

특히 연산이 일으킨 무오사화 보십시오. 조의제문을 썼던 김종직을 부관참시 하지 않습니까. 당시 권력자였던 이극돈이 기록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관들에게 압력을 넣으려고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 사관 김일손이 썼던 그 사초를 공개해서 사화를 일으킨 거.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런 기록을 공개해서 사화를 일으켜서 국가를 망가뜨린 사람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핵심 유자광, 이극돈 모두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특히나 유자광은 어떻게 죽었느냐.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능지처형을 받습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 있을 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능지처참도 사약을 내리고 죽인 이후에 그 시신을 능지처참합니다. 그러나 유자광은 살아 있는 상태로 그렇게 죽습니다. 조선에 딱 2명, 김자점하고 유자광하고 얼마나 악인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록을, 공개하지 말아야 될 기록 그다음에 본인이 죽은 이후에 그다음 세대에 해야 될 내용들.

세종도 자기 아버지 기록을 보고 싶었어요. 왜? 아버지가 너무 많은 살육을 했으니까.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그리고 아버지가 명을 내려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포은 정몽주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관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 성군마저 그 유혹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 성군 세종도 기록을 보고 싶어 한 거야, 기록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수정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관들이 난리가 났지요. '전하, 조선의 룰은 전하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종대왕의 실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하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성군인 거야, 자기의 욕망을 내려놨으니까. 그래야지 국가가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바로 기록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록이 갖고 있는 무서움. 그래서 저는 기록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 거꾸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보다 더 정치를 잘할 수 있게.

국회에서 기록원을 만들게 되면 그간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제2소회의실, 제3세미나실, 제1간담회실부터 10간담회실까지 했던 수많은 각종 세미나들, 이런 데 그냥 세미나 하고 버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모으고 모아서 이것을 스캔받고 그래서 그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이런 일을 했고 이런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본인은 잊어버릴지언정.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국회가 그것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이것을 다 해 주겠다는데 왜 이것을 못 하게 하냐 이겁니다, 자신의 역사를 자신이 기록하지 못하는데 국회가 대신 자신이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록해 주겠다는데. 그

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평가해 주고 김준혁, 아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연구해 주겠다는 데 이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송구한 이야기지만 일종의 트집이자 아집일 수도 있다. 그러나 큰 정치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야 심각한 대립 국면에서 무언가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고, 또 정부 여당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고집 피우고 여야 합의했는데 갑자기 깨기도 하고 잘못이고 미안하고 송구하지요. 이런 것들 우리 서로 반성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용기를 갖고 있는 것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실수했다 사과하는 것들 필요한 거예요.

저도 작년 국정감사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잘못 알아 가지고 교과서업체 이야기하다가 제가 사실이 잘못……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이 질의하다가 본인이 실수해서 사과하는 것 처음 봤다는 거야, 20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사과할 때 되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야가 같이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래서 그 사과를 또 서로 간에 용기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나은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들 필요한 거지요. 이게 바로 협력이고 협치고 존중이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존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오늘 저녁 8시에 국회기록원법은 통과됩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데 이제는 함께 나아가는 것……

이 필리버스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니까.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통과되고 나서 이것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함께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제가 원래 우리 원내대표님, 수석께서 2시간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4시간 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12시까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어제 갑자기 하게 돼 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시간, 언제 와야 되는지…… 그래서 계속 뜬눈으로 있다가 아까 제가 3시 8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좀 앉아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압력도 커져 가고 또 남북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도 크고요. 소상공인들 어려움도 더 큽니다. 정말 어느 한 가지, 어느 하나가 지금 낫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산 선생님 이야기를 끝으로 정리할까 해서……

강진에 가면 사의재라고 하는 작은 주막집이 있습니다. 다산이 강진으로 20일 동안 걸어 내려갔지요.

제가 예전에 쓰려고 했던 책이, '다산의 딸'이라는 책을 좀 쓰려고 했었습니다. 다산의

딸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다산의 살아남은 딸이 둘 있었거든요. 하나는 정실부인에게서 낳은 딸이고 하나는 강진에 유배 갔다가 낳은, 그 지역에서 얻은 후처와 낳은 딸 홍임이인데 두 사람의 눈으로 보는 아버지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쓰다가 완성을 못하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래서 강진을 제가 무척 많이 갔습니다.

제가 연천 명예군민인 것은 김성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강진도 명예군민인데 그 지역의 사의재에 가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네 가지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네 가지.

다산이 서울 노량진에서 가족들과 만나서 이별을 합니다. 그때 가족들 눈에 비쳤던 다산은 온몸이 고문을 받아 가지고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다 20일 동안 절뚝절뚝하고 내려갔지요. 내려가서 첫날 그 겨울에, 대략 12월 20일경에 내려갔는데 그때 그 주막의 불도 때지 않은 뒷방, 얼마나 골방이겠습니까. 뒷방에 들어갔지요. 다산 선생 글에 보게 되면 너무 추웠지만 가장 행복한 밤을 보냈다고 써 놨습니다.

다산이 참 재미난 글을 많이 썼어요. 여름에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벼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서 잠을 못 자고 밤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 냉목, 냉목해 갖고 몸이 깨끗해지면 벼룩이 안 오니까 그렇게 해서 밤마다 몰래 나가서 냉목을 하는 이런 내용도 글에다 써 놨지요.

그런데 그 사의재, 마땅히 해야 할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말을 삼가라. 누구에 대한 비난 같은 것 하지 말고 누구 욕하지 말고 숨어서 누구 막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산은 죄가 없었는데 유배를 왔어요. 그러니 하고 싶은 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삼가는 거지요. 말에서 다 화가 나오거든요. 뭐 그냥 기분 난다고 누구, 저 인간은 욕심 많고 저것 작살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하다가 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나고 자신의 인격도 떨어지고…… 말을 삼가라.

두 번째, 생각을 맑게 해라.

유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없이 유배 온 사람이라 그 분노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맑게, 그래야지 본인이 더 미래가 있지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수는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분노하고 가볍게 처신하고 말도 막 하고 생각도 막 어지럽게 하고 하지요. 그러나 진짜 내공 있는 고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맑게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옷을 단정하게 입자.

유배 온 사람이라 무슨 비단옷 입고, 고급 옷 입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누추하게 살지는 말아야지요, 옷을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선비는 무릇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옷을 단정하게 입자.

저는 마지막 네 번째가 참 대단했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거였느냐? 행동은 장엄하게 해라.

유배 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웅크리고 비굴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가 굶으면 굶었지 죽으면 죽었지 풀은 안 뜯어 먹고 산다'.

제가 좌구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가, 옛날 그분이 썼던 말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곧지만 오만하지 않고 굽었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글귀도 들어오고 그래서 다산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행동은 장엄하게 해라.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우리 정치인들이, 사실 여기 삼백 분의 정치인들이 다 고수들입니다. 나름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내공과 경지에 있는 분들이고 또 과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 온 분들입니다. 박홍근 의원님 또 허영 의원님 과거 학생운동 무지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김대식 의원님 참 어려운 경험 거치시면서 대학 총장까지 하시고 제가 정말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사이에 둘이 딱 정리하면 교육위가 안정되게 잘 운영되고, 물론 초선이지만 원체 내공이 높으셔 가지고. 다 이렇게 고수들이 옵니다. 여기 그 어떤 분도 모자람이 없는 분들이고 그 어떤 분들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분들이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어느 날 다산이 초당에 앉아 있는데 주모가 다산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다산 선생이 자기 형 손암 선생 묘지명,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손암 선생을 추억하는 글에 남겨 놓은 겁니다.

선생님…… ‘선비님’ 그랬겠지요. ‘선비님이 이 조선 땅에서 제일 학문이 깊은 선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산이 그러면 ‘내가 넘버원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요. ‘아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겠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최고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다산한테 ‘내가 들어 보니 선비님이 조선 최고라는데 내가 평소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다산이 ‘아이고, 저 노파가 물어봐야 뭐 물어보겠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파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비님, 내가 평생 궁금한 게 하나가 있다’, ‘뭐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난 이게 궁금하다. 아니, 어머니가 애를 낳지 어떻게 아버지가 낳느냐. 그리고 어머니가 낳으면 아버지가 기르지 왜 어머니가 기른다고 하느냐. 난 이거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달라’. 다산이 그때부터 막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 가지고 음양오행이 어떻고 요순 임금이 어떻고 온갖 이야기를 다 꺼냈어요. 장황하게 막 이야기한 거지.

그랬더니 주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비님, 조선에서 제일 학문이 깊다는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줘라’ 그래 가지고 또 다산이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노파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운 선비님도 이거 제대로 얘기를 못 하네. 그런데 나는 한편으로 그 말이 맞기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다산이 ‘어떻게 맞는 것 같으냐, 얘기를 해 줘 봐라’ 그랬더니 이 노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밤나무가 하나 있는데 밤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다시 밤나무가 나오더라. 그러니 저 밤나무가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밤을 낳은 거고 그 밤이 떨어지면, 그 땅이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가 나무를 기른 것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간 거야.

다산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래서 형한테 편지를 씁니다. ‘형님, 제가 오늘 새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 많은 공부를 해서 나름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를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모르는 것을 노파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노파의 말씀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새로 태어납니다’. 다산의 제3의 탄생, 제1의 탄생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제2의 탄생은 1789년에, 정확히 말하면 86년에 정조를 만나서 성균관유생으로 시작해서 제2의 탄생이 시작된 것이고 제3의 탄생은 그 노파를 통해서 낮은 사람들에게서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얻고 그것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제3의 탄생이 거기서 시작된 거지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명문 대학 출신이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명문 가문 출신이고 해서, 내가 또 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안에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는 게 많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올리기도 하고 청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의정활동이 아닐까,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지 더 큰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로 오늘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김준혁 의원님, 역사 강의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혁 의원 고맙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충권)

(09시53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박충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방금 필리버스터를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정말 좋은 역사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3일 연속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우리 당의 박수민 의원님께서 세우신 기록을 한번 깨 볼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종결 표결을 할 것이기에 아마 기록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게 끝까지 해 달라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한데 제 다음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님께서 준

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너무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무제한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들은 어떠한 협의나 숙의 과정도 거쳐지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 수렴도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곳 정치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악법들이 졸속으로 전격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수많은 악법들이 정말 우리의 77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토대를 놓고, 정말 피로써 지켜 내고 발전시켜 온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수십 년 뒤로 후퇴하지는 않을까,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그런 상태로 빠져들지는 않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박수민 의원님께서 작년에 본인께서 기록을 세우셨던 15시간 50분이라는 기록을 이번에 17시간 15분 필리버스터로 필사적으로 진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국민 여러분께 우리가 알려 드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 여러분께 알려야 하겠기에, 우리가 정말 피로써 지키고 발전시켜 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77년 자유민주주의가 속수무책 찢겨져 나가는 것을 단 하루라도 지연시켜야 하겠기에 이런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107석이라는 정말 적은 숫자의 의석을 가진 우리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곳 정치권을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이 조직개편이, 이 대대적인 체제 개조가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침묵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찬란하던 우리의 경제와 문화의 번영은 영영 사라져 갈 것 같아 두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냐, 베네수엘라 같은 가난한 포퓰리즘 독재국가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을 쇠락의 길로 밀어 넣고 있는 이 악법들의 실상을 최

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께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서 있을 때까지 막아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막아 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재화의 길로 접어든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피를 흘려야 하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 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 악법들을 막아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쇠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부터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배경 설명을 여러분께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오늘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지요. 국회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존재하는 국회기록보존소를 국회기록원으로 승격시키는 조항과 그리고 26일 날 처리됐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상임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처들을 조정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회기록보존소를 국회기록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사무처에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있는데 직원이 한 77명 정도 됩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정쟁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 직원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기록보존소의 인력을 충원하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업무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도와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기록보존소를 국회기록원으로 승격시키면서 지금의 국장급이던 국회기록보존소장을 차관급인 원장으로 승격을 시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공공기록 보존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다 있습니다. 해당 삼권분립의 헌법기관들에 있는 기록보존소들의 수장은 국장급이거나 과장급, 실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경우만 정무직인 차관급으로 승격을 시킨다고 하면 다른 헌법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소장의 직급을 승격시켜서 수위를 맞춰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생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상황과 그리고 그 기록을 하는 사람의 세계관과 그리고 어떤 이념 이런 것에 따라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기록이라는 것은 중립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장급인 이 실무자의 직급을 정무직인 차관급으로 승격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 국회기록보존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임명이 되는 정무직인 차관급의 인사가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법에 명시된 대로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모두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표했습니다. 정말 강경한 반대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고 합의를 거쳐서 더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회기록보존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대를 한 것이고.

또한 국회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지금은 국회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개정안에는 300명 국회의원 각각의 의정활동 기록과 그리고 모든 정당들의 기록을 함께 보존하는 것으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의 기록을 따로따로 보존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당들의 기록까지도 보존하게 된다, 물론 이 기록을 강제로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정당들이 기록을 보내오게 되면 그것을 국회에서 기록을 하고 혹은 또 홍보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정당의 기록은 더 많이 홍보되고 어떤 정당의 기록은 덜 홍보되는 그런 불균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원내정당도 있고 원외정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외정당들까지 수많은 정당들의 기록까지도 다 보존할 것인가. 정당은 정당법상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정당의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기록을 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완성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 부처들을 변경하는 법조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회운영위원회에는,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지지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부처가, 명칭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처에 기획예산처가 포함이 되고 국회기록원이 포함이 됩니다. 이 국회기록원을 상임위에 포함을 시켜서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곳에 데려다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문책을 하게 되면 정당 간의 의석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힘의 균형에 따라서 기록보존원이 편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데 명칭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이 되면서 소관 부처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지면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소관 부처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지요. 이 상임위원회는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면서 소관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뀌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하위법령들의 개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지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번에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뀌면서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그것이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소관 부처로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정부조직 개편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논의도 없이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엄혹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안보·경제·민생·미래 모두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지난 9월 3일 북·중·러는 천안문 망루에서 신냉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과 푸틴을 등에 업고 더 많은 핵무기를 찍어 내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의 8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북한을 출발하기 전에 공개했던 화성-20형이라고 하는 최신형 ICBM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최종 병기인 다탄두 ICBM이지요.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번 9월 1일 날 이 ICBM의 개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9월 8일에는 이 화성-20형에 사용이 되는 1단 고체연료 ICBM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엔진의 추력이 1700킬로뉴턴이 넘습니다.

1700킬로뉴턴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9.8이지요. 천칠백육십몇 되는 킬로뉴턴을 9.8로 나누게 되면 201tf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t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지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7년 초쯤 될 겁니다. 그때 북한이 액체연료 ICBM 신형 엔진을 공개합니다. 그 신형 엔진의 이름을 백두산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면 과거에 북한이 ICBM이라든가 수많은 신형 무기들을 가지고 대형 도발을 저지를 때 많이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 보신 기억이 조금씩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형 엔진을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대출력 ICBM 엔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이슈가 됐었지요.

우리나라도 나로호 발사를 위해서 엔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북한이 공개한 75t 엔진, 그 백두산 엔진의 추력이 75tf입니다. 75t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액체연료 ICBM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 되는 액체연료 1단 엔진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KAI에서 개발 중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지요. 그런데 북한이 그 당시 2017년 정도에 75tf 정도 되는 액체연료 엔진을 공개한 지 불과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한 8년 정도 지난 시점이겠지요. 이 시점에 그것의 거의 세 배가 되는, 그것도 고체연료 엔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많이들 아실 건데 고체연료가 좀 더 많이 진전된 기술력을 가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체연료는 미사일에 미리 장착해 뒀다가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력과 그리고 기습적인 공격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발전된 ICBM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엔진을, 이번에 백두산 엔진의 추력의 거의 3배가 되는 그런 고체연료

ICBM 엔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라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것과 동급의 엔진을 사용하는 ICBM이 전 세계에 딱 2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3년 한 10월쯤 실전 배치했다고 알려진 러시아의 최종 병기 사르맛이라고 하는 다탄두 ICBM입니다. 이 ICBM은 탄두를 최대, 핵탄두를 최대 15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ICBM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러시아가 아직은 미국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CBM에 사용된 1단 엔진의 추진력이 200tf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이지요. 이것과 동급인 고체연료 1단 엔진을 김정은이 지난 9월 8일에 엔진 분사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사르맛과 동급인 ICBM이 1개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중국이 80주년 기념식에서 공개한 둥펑-61이라는 ICBM입니다. 80주년 열병식의 하이라이트였지요. 이것 또한 러시아의 사르맛과 거의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잡아도 핵탄두를 10개 정도까지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화성-20형도 이것들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만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북한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시험 발사를 한 것이 화성-19형입니다. 높이뛰기 기록이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지요. 거의 7000m 이상의 상공까지 고각발사를 했던 고체연료 ICBM이었습니다. 이것도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ICBM입니다. 그러면 이 다단의 기술력을 북한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00tf의 1단 엔진에다가 2단·3단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최소 500㎏짜리 핵탄두 10개에서 15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최종 병기 ICBM의 시험 발사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담이 곧 예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북한은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북한 정권이라면 화성-20형의 시험 발사를 언제쯤 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빠르면 10월 10일 이전 10월 9일이나 좀 늦으면 우리가 한창 APEC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 시점 그때쯤이면 이 화성-20형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 최정상급의 다탄두 ICBM, 그것도 방어가 정말 극악으로 어려운 다탄두 ICBM을 북한이 손에, 김정은이 손에 넣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화성-20형은 사거리가 1만 5000㎞다. 그러니 북한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 동부지역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보라고 공개한 미사일이겠느냐? 결국 미국 보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해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화성-20형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해석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더더욱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 해당 국무위원의 이 해석이, 판단이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것인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기자님들 그리고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좀 더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는 곳을 졸업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말까지 제가 대학교를 다녔고요. 이곳은 어떤 대학교인가, 쉽게 말해서 북한의 최신형 ICBM과 핵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무기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들을 키워 내는 양성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김정은의 손에 들려 있는 핵무기들과 최첨단 무기들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의 손에 쥐어질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 주는 대규모 북한의 방위산업의 시작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북한의 핵무력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그런 핵심 인력들을 양성해 내고 있는 북한 국방력의, 군사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군사력의 코어 중의 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구글 어스를 들어가셔서 북한의 평양의 용성구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들어가서 국방종합대학교를 찾아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 촬영된 그 시설들을 보시는 순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저렇게 못사는, 저렇게 열악한 북한에 어떻게 이렇게 돈 냄새가 물씬 나고 현대적인 시설이 대규모로 갖춰져 있을까? 그만큼 북한 정권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국방대학교의 연혁을 조금 찾아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대학교는 1963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지요. 김일성이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총결집시켜 가지고 탄생시킨 대학교라는 것입니다. 이미 1963년 이 당시에, 이 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최종 목표를 ICBM 개발로 잡았습니다.

당시에 처음 출발한 학과가 세 개였는데 1학부는 로켓공학부, 2학부는 전자공학부, 3학부는 금속공학부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에는 재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기체계들을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공학부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공학부 혹은 신소재공학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공학부는 왜 있는가. ICBM을 만들어서 대륙간을 넘어서 미국까지 타격하려면 이것을 전자적으로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공학부가 있었고. 1학부가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로켓공학부입니다. 로켓 동체 설계부터 엔진,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를 총괄하는 학부였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것이 국방대학교입니다. 지금은 학부가 11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AI 무기체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하려고 이 대학교를 설립했는데 왜 최종 목표가 ICBM인가,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은 이념적인, 편향적인 대북관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일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1월이지요.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극동방위선을 설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방어선은 알루샨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방어선입니다. 당시 이 방어선에서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을 선언한 이후에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김일성은 1945년에 북한 땅에 들어오면서 거의 무주공산이었던 북한 땅을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적화통일 야망을 꿈꿉니다. 한반도 전역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와 미군이 주둔하면서 김일성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적화통일 야망을 꿈꾸면서 1945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김일성은 소총 생산,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 하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을 북한 지역에 지었었지요. 그 산업 시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총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원래는 러시아에서 무기를 조달하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스탈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기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총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북한의 기술인력들과 노동자들을 닦달합니다. 그래서 1948년인가에 북한에 최초의 기관단총, 자동소총이지요. 자동소총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국공 내전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산당 군대가 장개석의 국민당군에 의해서 패퇴해 가지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은 압록강 지역을 통해서, 공산당 군대를 북한 지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포위되었던 공산당 군대를 압록강을 통해서 빼 갖고 두만강 지역으로 해서 탈출시켜 줍니다. 그때 다량으로 생산해 놨던 기관단총 한 10만 정 정도를 중공군에게 무장시키고 모든 보급품을 지급해서 두만강으로 빼돌려 갖고 결국에는 공산당군이 역전에 성공을 해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지요. 그렇게 그때부터도 이미 김일성은 적화통일 야망으로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이 정말 김일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다행히도 애치슨 라인을 긋고 남한에서 철수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드디어 그렇게 꿈꿨던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하지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격적으로 남한을 침공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군이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게는 한 은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93세이신데 17살의 나이에 6·25전쟁 당시에 북한을 탈출하셔서 한국에 와서 국군에 입대해서 6·25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시자 우리나라의 원로십니다.

당시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님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신체검사를 하는 데에 가서 시력검사를 하게 되면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둘러대면서도 어떻게나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지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하는데도 합격이라고 신체검사를 하는 판정원이 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떡하는가, 이제 북한군에 끌려가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은사님의 아버님께서 밤중에 나가셔 가지고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정보를 하나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을 하는, 사상 검증을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면서 말합니다. 남한에 가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정치장교, 군사장교들을 모집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남한에 가족이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결격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 탈락하고 결정적으로 군에 끌려가지 않게 됐지요.

당시에 은사님께서는, 지금 북한 지역이지요 강원도 평강군에 사셨습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시면 평강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평강역에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군사물자들을 수송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열차들이 평강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군사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차에서 군사물자들, 탱크를 비롯한 수송차량들까지도 다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당시에 지어 놨던 플랫폼은 열차보다 많이 낮아서 탱크라든가 자동차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님도 평강역에 플랫폼을 확충하는, 그러니까 높이 올려서 열차와 높이를 맞추는 플랫폼 공사에 동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높여 가지고 열차에서 바로 탱크라든가 수송차량들이 나올 수 있게 공사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물자들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남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만 봐도 북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셨던 은사님께서 1951년에 드디어 한국, 51년 초에 남한으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당시에는 17세셔 가지고 군대에, 군에 입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속이셔 가지고 국군에 입대하셔서 북한군과 싸우시다가 심각한 총상을 입으시고 구사일생으로 미군에 의해서 구출돼서 목숨을 보전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사회가 주는 혜택을 입어서 성장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은사님의 얘기를 드리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드리다 보면 그분의 애국심과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들 이런 것들을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원래 하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련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시에 우리 국군에는 전차도 없었지요. 그러나 북한군은 다량의 전차까지 보유하고 파죽지세로 남한을 침공해서 내려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지요. 그 부분에서 북한군 전차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 국군은 전차와 상대해 본 적도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 전차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전을 치르셨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남진을 하고 있던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국군의 아주 치열한 저항으로 파죽지세와도 같던 공세가 주춤하게 되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맥아더 장군이 정말 담대한 월미도 상륙작전을 실행합니다. 그 작전이 성공해서 우리는 북한군을 북한 지역 끝으로, 압록강 경계선까지 패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망이, 그 달성이 코앞에서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작전이 바로 우리 한미연합군이 펼친 월미도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군이 정말 꽁무니 빠지게 북쪽으로 퇴각을 하게 되는 와중에 중공군이,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공군이 북한 김일성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중공군이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이 된 10만 이상의 파병을 결정하게 되고 기습적으로 파병이 되지요. 그 정보를 우리 한미연합군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맥아더 장군은 북한에 핵폭탄 투하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정보가 일부러 노출시켰는지 혹은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전역을 휩쓸고 북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지요.

당시의 그 기억은 김일성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됐고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 결국 미국 때문에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야 됐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피신할 만큼 정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 생각한 것은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면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배제하는 것이 선결돼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북한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주구장창 오늘날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견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ICBM과 핵인 것입니다. 이런 노선들은 김일성 시대뿐만 아니라 김정일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의 김정은 시대에 와서까지도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일성이 6·25전쟁이 끝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미국을 견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미국을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낮이든 밤이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1957년입니다. 러시아가 R-7이라고 하는, 세묘르카라고 부르는 ICBM을 세계 최초로 시험발사에 성공시킵니다. 처음으로 미사일이 대기권을 나갔다가 대륙 간을 넘어서 다른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거지요.

김일성이 바로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시킵니다. '이것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핵심 기술력을 러시아로부터 제공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김일성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산업 시설들과 기술 인력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단이 바로 ICBM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어찌어찌 노력하면 ICBM을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스탈린을 찾아가서 미사일 기술력 기술이전을 제안합니다. 당시에는 첨단 기술력이었겠지요. 그러나 그 기술력을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손쉽게 넘겨줄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거리가 아주 짧았던 한 200㎞ 정도 되는, 그러니까 김일성이 손에 넣으면 한국을 침공하는 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지요. 프로그 미사일인가 아무튼 그랬던 건데 그런 미사일을 몇 개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그쳤던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우리 자체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부터 김일성은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병진노선, 그러니까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국방을 너무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는 경제·국방이라고 하지 않고 중공업과 경공업을 병진시킨다라고 하는 병진노선을 천명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공업이 결국에는 국방공업입니다. 그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침략 야망을 조금은 숨기느라고 경공업과 중공업의 병진노선이라고 하지요.

그걸 하면서 첫 단계로 한 것이 국방종합대학교입니다. 당시에는 명칭이 국방대학이었

습니다. 그 뒤로 그 국방대학의 명칭이 강계공업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방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또 국방종합대학교로 바뀌었다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자기 이름을 달아 줘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정말 북한에서 그 어떤 교육기관들보다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교가 됐습니다. 중간에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파투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잠깐 소외됐던 적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기관도 그 단독기관 앞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동시에 갖다 놓은 기관은 없습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시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김정은이 자기의 이름까지 붙여 줄 만큼.

그러면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화성-20형이 사거리가 1만 5000㎞가 되니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이 얘기들을 제가 드리려면 정말 24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께서는 지난 9월 25일이지요,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

그리고 최근 2023년 12월 말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최초로 천명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얼핏 들으면 북한이 적화통일 야망을 버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김정은이 지금의 현시점에 북한 정권에 있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키고 힘을 키우는 것이 내부를 결속시키고 힘을 좀 더 키우는 것이 맞는 단계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세운 것이지 그 야망을 결코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그 논리에 편승해서 우리의 통일부장관마저도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사실상의 두 국가를 주장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야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국정원이 운영하던 대북 라디오 방송, 우리 군이 운영하던 대북 라디오 방송, 모든 대북 라디오 방송들을 다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발언이야말로 자해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이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가장 큰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뭔가 북한 정권이, 북한의 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식 변화가 일어난 것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것이 대북 라디오 방송입니다. 심리전입니다.

북한 내부,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 가고 있어요. 우리 탈북해서 오신 분들을 딱 오시자마자 바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설문을 하게 되면 50%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이런 거는 지지한다

고 하는 것이 거의 100%였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50%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만큼 체제가 이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민심이 이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를 결속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설파하면서 남한은 적이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 주다 보면……

지금까지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대한민국은 잘사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저렇게 예의 바르고 세련돼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접해 왔던 것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고 못사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고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 내부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거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하에서 북한의 간부들은 폭압적이고 지배하고 이런 체제를 살았는데 한국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 일본인들이 잘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랑 민족이 다르니까 더 잘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저들은 저렇게 잘살고 저렇게 세련돼 있는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 이러면서 의심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 변화야말로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지금의 체제를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핵이고 ICBM인 것이고 강한 군사력인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못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정보를 통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이 바로 외부에 있는 적인 겁니다. 북한이 설정해 놓은 가상의 적, 미국과 남한, 일본 이런 나라들이겠지요. 이런 외부의 적을 설정해 놓고 '이들이 우리 북한의 주민들을 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위협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만들려고 북한이 끊임없이 때가 되면 도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지난번 국정 현안질의에서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언제 먼저 도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건 궤변입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100여 차례 무인기를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도 무인기가 왔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용산 대통령실에 북한의 무인기가 출몰했습니다. 이렇게 무주공산처럼 정말 제 집 들듯이 북한 무인기가 드나드는 것 이거 참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우리 무인기가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 위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게 되는데 그 도발을 해 놓고는 북한 정권은 뭐라고 말하냐,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먼저 도발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한과 미국이 도발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줍니다, 강대한 외부세력들이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체제 결속을 하는 거지요.

그 외에도 북한의 핵과 북한의 인권이 정말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인권유린 상황,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못 먹고 못살게 하고 또 잡아 가두고 처벌하고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수많은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당화되는 것이 바로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은 체질적으로 밖을 향해서 계속 도발을 해야 되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발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도발을 했는데 자기들 군사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당하겠지요. 그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핵과 ICBM이고 강한 군사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이 지금 단계에서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군사력이 충분히 미국과 소위 맞짱 뜰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팽창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팽창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지금은 내부 결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팽창을 하게 되면 다시 적화통일 야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남북 대화라든가 협상을 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안면몰수하고 입장을 바꿉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를 하다가도 뒤통수를 때리고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 지난 김대중 정부 때도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한창 월드컵 열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뜨거울 때 연평해전으로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냉철해야 됩니다. 외교는 정말, 글로벌 무대는 정말 야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도 그럴진대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김 씨 일가가 핵 개발을 하는 데 돈을 갖다 주고 시간을 벌어 주고, 또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3년에 북한의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북한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아사자가 발생한 정말 최악의 사태였지요. 그때 그 고난의 행군이 1998년쯤에 끝났는데 끝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대한민국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모드가 형성되고 남한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와 자금이 들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끝난 겁니다. 북한 자체적으로 끝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끝난 지 한 5년 정도 되는 시점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북한의 실상은 정말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24시간 전기가 들

어오지요. 전기가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나가면 그건 사고입니다. 대규모 사태지요. 정전 사태가 되겠지요. 사고인데, 북한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에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사고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하루 1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올까요? 그랬는데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전기가 안 꺼지는 겁니다. 24시간 불이 들어옵니다.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겨우 회복을 했는데, 갔더니 보급도 상당합니다. 시설도 너무 좋아요. 2003년인데 저는 브라운관으로 돼 있는 컴퓨터, 아주 옛날 컴퓨터를, 제가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를 영재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영재학교에도 브라운관 컴퓨터가 아주 낡은 것, 그 당시에 도스를 썼나요? 도스를 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컴퓨터를 처음에 배웠는데 국방종합대학교를 갔더니 평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아주 얇은 평면 디스플레이의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컴퓨터가 있는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당시 삼성인가 LG인가에서 만든 컴퓨터였지요. 북한의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내 준 최신형 컴퓨터가 ICBM과 핵과 무기를 개발하는 대학교에 전량 보급된 겁니다. 그야말로 제가 느끼고 살아왔던 북한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학교였어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학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내 준 것이 다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도 북한의 군수기업, 군수연구소들, 국방연구소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도 방위산업체들에는 24시간 동안 전기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자가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많은 군수기업체들을 가 봤습니다. 넉넉해요.

저는 북한에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족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래 지구는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가 없나 보다. 심지어 이런 비닐봉다리 하나, 우리 다 쓰레기로 버리지요.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 비닐봉다리 하나 계속 재활용해서 씁니다, 다 찢어질 때까지. 그렇게 부족한 게 원래 지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수기업체에 들어가니까 너무 넉넉해 가지고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북한의 군사기술력이, 핵무장·핵기술력이, ICBM 기술력이 가장 빠르게, 진짜 한 단계를 점프할 만큼 발전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졸업할 당시, 2007년에 졸업했는데 그리고 탈북을 2009년에 했는데 그 시점에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완전히 한 단계를 점프해서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것을 김정일이 군수산업에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2015년부터 김정은이 본격적인 ICBM 도발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같은 이런 첨단 ICBM들을 북한이 잘 공개를 안 했지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남한하고는 대화 모드에 있으면서 꽁꽁 숨겨 두고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한의 ICBM 기술력이 개발되는 이 수준의 거의 한 8부 능선까지 김정일 시대에 넘어섰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

그래서 그때 이미 액체연료 ICBM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끝났어요. 다만 공개하지 않았

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 개발을 해서 세트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이렇게 세습 선물로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얘기를 했겠지요. '네가 이제 준비가 완료되면 이것 세트를 가지고 시리즈로 쫙 공개를 하면서 남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라.'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2009년, 10년쯤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굶어 죽어 가는 북한이 무슨 ICBM이냐고. 그런데 2015년쯤부터 해서 2017년, 18년, 19년 그쯤까지 북한의 공개된 ICBM들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미 다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알 수가 없었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숨겨 놓고 개발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김정은이 더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러시아·중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더 이상 시간을 벌어 주고 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탄두 ICBM 화성-20형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북한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대북정책을 할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북한 정권하고 대화와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애네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저지시켜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야, 그 속내를 알아야, 그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올해지요, 지난 4월 26일에 5000t급 북한판 이지스함의 진수식을 참관했습니다. 그 함선의 이름, 전함의 이름이 최현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이지스함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능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이지스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입니다. 탐지거리가 우리에 비해서 짧다, 미사일의 정확도가 우리보다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기가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미사일이 아무리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한들 지금 화성-20형, 1만 5000㎞를 탄두 1개가 아니라 최소 10개 보낼 수 있는 그런 미사일까지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거의 두 달 뒤에 두 번째 이지스함의 진수식을 합니다. 물론 진수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물에 빠져 갖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욕심을 부린 거지요. 멋있게 배를 도크에서 이렇게 미끄러뜨려 가지고 촥 빠졌다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겠지요. 김정은은 그런 쇼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그것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강건호라고 하는데 그 강건호에다가 모든 미사일을 다 집어넣고 무게가 무거운 걸 미끄러뜨리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부조직법,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다 실어 놓고 그 무거운 걸 미끄러뜨리다 보니까 넘어졌지요. 아주 큰 망신을 당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함이 진수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이걸 진수하면서 뭘 얘기했느냐? 아마 이걸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해군을 원양해군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해군은 연안해군입니다. 멀리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양해군을 창설하겠다는 겁니다.

5000t급 이지스함 2대가 나왔지요, 벌써.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얼마 전 지난 9월 16일 우리 군이 입수해서 발표한 정보가 있지요. 러시아 푸틴이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소형원자로 모듈을 북한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미 핵추진 잠수함 동체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선은 건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원자로를 얹고 미사일을 얹어서 띄우면 되는 겁니다. 그 원자로를 러시아가 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진수를 못 했지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곧 이 핵추진 잠수함,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3000t 이상 되는 그런 잠수함을 진수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멈춥니다, 여기서. 이런 이지스함들을 계속 찍어 낼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핵추진 잠수함을 1대에서 멈추지 않고 5기, 6기 계속 늘려 갈 겁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좀 황당한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09년, 2010년에 한국에 와서 북한이 ICBM 개발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황당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당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설칠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뒤에 북한군이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들을 거느린 대규모 북한군 함대를 태평양 해상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분명히 김정은은 실행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을 등에 업고 충만한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 무력을 강화하고 원양함대를 키워서 군사력으로 대북 제재를 돌파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해 볼 것 다 해 봤지요,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도 앉아 봤지요. 남북한 대화도 해 봤지요.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서 원양함대를 만들어서, 북한 단독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 함대를 꾸려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해상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해양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진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대규모 함대를 만들어서 해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해상로를 확보하게 되면 김정은은 합법적으로

대북 제재를 군사력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까지 가는 해상로를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무기를 팔아먹어도 됩니다, 중동에다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요처가 중동 아닙니까? 북한의 무기는 가성비가 좋아요. 중동에서 아주 잘나갑니다. 지금은 만경봉호에다가 숨겨서 나가다가 미군한테 걸리면 다 뺏기고 체포당하지요. 그런데 이 만경봉호를 수송하는, 호위하는 대규모 북한 해군 원양함대 전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은 이거 노릴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야, 지금 김정은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대북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 대통령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도발을 한다. 이 발언들을 제가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안보 의식하고 대북관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이 체제 유지를 위한 거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것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 김 씨 일가 삼대를 거쳐 오면서 북한에 누적된 인권유린, 그 인권유린 상황 그것 때문에 북한은 지금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오픈했다가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 내부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외부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고 도발을 하고도 살아남으려면 강한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이 필요한 것이 지금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원양함대까지 갖춘 북한이라고 한다면 적화통일 야망 꿈꿔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전면적인 도발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사력이 강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핵 억제력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만 명의 미군이 존재하는데 감히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에다가 핵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가 혼자 단독으로만 국가 방위를 수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세계 전역에 다양한 연합방위체계를 운용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할 것 없습니다. 다 나토를 비롯한 여러 동맹을 맺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킵니다.

북한조차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북중러 삼각동맹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천안문 망루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셋이 자기들 세력 과시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6·25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냈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해서 지켜 낸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혼자서 대한민국 공격했나요?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지요. 러시아 군인들도 파견됐고 수많은 무기들이 러시아에서 넘어왔고 보급이 넘어왔고 심지어 중국은 10만 명 이상의 중공군을 이 한반도에 파견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혼자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나요? 우크라이

나는 혼자서 러시아하고 싸우나요? 러시아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도움을 받고, 김정은 정권의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보급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자유 진영의 국가들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이지요. 세상 어느 나라가 혼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잘한다,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하여튼 김정은이 자기 야망을 자기 속에서, 자기 최측근들하고만 나누던 그 야망을 이번에 80주년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천안문 망루에서 슬쩍 비친 겁니다. '난 팽창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군사력으로 이 제재를 뚫고 싶어' 이 속내를 비친 겁니다. 김정은의 야망이 원양함대에서 멈출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지랖 넓게 지금 이란도 핵무기 개발하다가 이스라엘하고 미국한테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오지랖 넓게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여러 불량 국가들에게 핵우산 제공하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내가 핵우산을 제공해 줄 거니까 우리 무기 좀 많이 사 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무기를 판매할 가장 좋은 루트지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GDP가 40조입니다. 고작 40조 해 가지고 북한이 무슨 항공모함이고 원양함대고 핵우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얘기를 하셨지요. '우리 국방비는 북한의 GDP의 40조보다 훨씬 큰 60조 이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2000조다' 그런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2000조가 아니라 240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6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이 무슨 군사력 팽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GDP가 북한보다 60배 크고 국방비도 북한의 전체 GDP보다 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북한 정권에게 우리의 존재가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면 우리가 못살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학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오판입니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북한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우리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인 거지요.

우리나라는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높습니까? 재료비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입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기술개발료부터 시작해서 제조비용, 전기료……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환경부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환경부, 규제기관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제조업, 나가 보십시오. 제조원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전기료가 몇 % 차지하는지. 반도체는 거의 60%까지 들어갑니다. 모든 제품의 제조원가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30%예요. 전기 비싸면 우리나라 제품이 더 이상 경쟁력을 못 갖춥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따라오고 있고. 옛날에는 가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겼지만 이제 성능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원전을 늘려서 좀 더 값싼 전기료 그런 것들을 산업들에 제공을

해서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국제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이 팔리고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더 많이 벌면 우리 노동자들 더 많은 성과급 받고 월급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낙수효과로 그 아래 1차·2차·3차 벤더들의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 좋아지고 자영업자들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국민 전체가 다 잘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천문학적인 비용이 무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무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비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존경하는 김병주 선배님 계신데 북한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 재료비 제로, 인건비 제로, 전기료 제로, 기타 부대비용, 임대료까지 다 제로입니다.

(「왜요?」 하는 의원 있음)

왜일까요? 북한의 모든 것은 김정은 것입니다. 땅도 김정은 것이고 시설도 김정은 것이고 다 김정은 것입니다. 군수공장, 국방연구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우리나라처럼 1억 이상의 큰 거금을 인건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산다, 조금 더 우대받는다라고 느낄 만큼 값싼 쌀, 가끔 먹다 남은 고기 있으면 좀 주고 그 정도면 돼요. 김정은이 먹다가 남은 고기 있으면 가끔 명절에 조금 주고 그러면 군수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정말 노동당의 배려를 받는다' 이러면서 정말 뽕이 빠지도록 무기 개발을 합니다.

북한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대부분의 자원을 자급자족합니다, 우라늄부터 시작해서 희토류까지.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가 다 제로입니다. 이것 돈 주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기 산업제조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품의 단가가 최소 30~60%가 전기료라고. 전기요, 북한은 다 공짜입니다. 북한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돈 주고 팔지요. 돈 주고 파는데 군수공장에 제공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나가면 사고입니다. 그 전기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북한이 머리를 싸매고 북한의 기술자, 개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연구해 봐도 도대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기술력은 러시아 같은 데 가서 가져옵니다. 군대 파병하고 무기 팔고 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 하나 좀 제공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 조기 경보기가 필요한데 조기 경보기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밖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 돈입니까, 자기들이 공짜로 만들어 낸 무기 팔아먹고 그리고 북한의 애꿎은 10대·20대 청소년들 다른 나라 명분 없는 전쟁터에 보내 가지고 그걸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 기술력을 가져오는데.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어요, 북한 정권은. 지금 소형모듈원자로 가져간 것 그것 바로 핵 추진 잠수함에 넣을 것 같습니까? 바로 다 뜯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김정일 시대지요, 김정일 시대에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나…… 이라크전일 겁니다. 90년대 초에 이라크전이 발발했지요. 당시에 73이스팅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이라크군이 러시아 T-80 전차, 72 전차인가 그것 한 80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M1 에이브람스 전차 한 10대인가 들고 나왔습니다. 교전 비율 8 대 1이지요.

그런데 이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미군 전차 10대가 러시아산 전차 T-72 전차를 완파시킵니다. 미군 전차는 한 대도 파괴 안 됩니다. 김정일이 깜짝 놀랍니다, '어떡하냐. 북한군 전차는 다 러시아 전차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줄 몰랐네. 저 미군 전차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대 무조건 공수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북한에 에이브람스 전차 한 대가 파손된 게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남기지 못할 겁니다. 미군은 자신들 무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들어갔습니다. 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셨는데 김정일이 그걸 보고 나서 전부 뜯어서 분석해 갖고 똑같이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똑같이 만들라고. 그것 90년대 초반에 착수했지요, 개발을.

지금 북한에 나왔습니다, 그 전차가. 북한의 최신형 전차입니다. 선군호2라고 부르나요? 자유진영 국가들에서는 북한 정권이 2020년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해서 M-2020 전차라고 부릅니다. 외형이랑 이런 것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것 미군 전차하고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원리나 구조나 뭐……. 물론 성능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날탄, 군에서 복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탄도 북한은 우라늄탄을 쓸 겁니다. 우리나라는 핵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날탄으로 우라늄탄을 쓰지 못합니다, 장갑도 그렇고. 그러나 미군은 날탄을 우라늄탄으로 씁니다. 우라늄탄이 텅스텐탄—우리나라가 텅스텐탄이지요—에 비해서 파괴력, 그러니까 관통력이 훨씬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소재 제조를 기술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거의 우라늄탄에 버금가는 텅스텐탄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기밀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북한군도 우라늄탄을 쓸 겁니다. 미국 하는 것 봤잖아요.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무기 개발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간다. 북한 개발자들 먹여 살릴 정도, 남들보다 조금 더 우대받는다고 느낄 만큼 제공해 주고 정말 필요한 기술력은 스파이들 보내서 군사기술 탈취해 오고. 옛날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탈취하려고 북한에서 스파이들 많이 파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적발돼 가지고 죽어 나오고 그랬습니다, 무기 기술 빼오겠다고 가 갖고. 스파이들을 통해서 가져오고 혹은 해커를 통해서 군사기술력을 빼 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과학원이나 원자력연구소나 그리고 국방부, 많은 기관들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당했지요.

해커 얘기가 나와서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일평균 해킹 공격당하는 건수가 160만 회가 넘습니다. 그중의 80%가 북한발입니다. 북한은 세계 3, 4위 정도의 해커 부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미국의 CIA를 능가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북한의 해커부대 김수키, 라자루스 이 정도만 알았지요. 지금은 해커부대가 너무 규모가 커지고 전문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해커부대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려진 것만 블루노로프 뭐 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북한같이 열악한 나라가? 제가 2000년에 영재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한 열세 살, 열네 살 정도 될 때입니다. 갔는데

정말 천재 같은 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1등과 2등을 매번 반복하던 친구였는데 그 학교는 매월 경시대회를 합니다. 경시대회를 하고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큰 보드판에다가 정문 앞에다가 써 놓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대문짝만 하게 써 놓고, 저기 끝에서 170등까지 대문짝만하게 써 놓고 그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그중에 1등, 2등 하는 친구 2명이 있었는데 정말 천재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느껴지는 천재성을 가진 친구 두 명이었는데 이 친구 두 명이 한 6개월 공부하다가 뽑혀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뒤에 방학이라고 왔는데……

'야, 너네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 어디 갔는지 말을 못 해 주겠답니다. '뭐 배우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말 못 해 주겠다더라고요. 한참 졸라서 물어봤더니 이것만 얘기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방학숙제를 받았는데 그 열세 살, 열네 살짜리 아이들이 스위스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방학숙제랍니다. 해커부대 양성소에 간 겁니다. 그 열세 살, 열네 살 아이들한테 스위스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방학숙제를 주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지요.

그리고 저도 나름 그래도 공부를 잘했다고,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힘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고 하는, 김 씨 일가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에 갔는데 저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이 해커부대에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GDP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절대 북한이라는 저 나라를 판단할 수 없다. GDP 40조짜리가 어떻게 사거리 1만 5000㎞짜리 탄두 10개 장착할 수 있는 ICBM을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정상급 ICBM 만들겠습니까?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ICBM을 개발하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무리 백번 양보를 해서 얘기를 드려도 화성-20형이 사거리 1만 5000㎞라서 미국을 겨냥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화성-20형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240㎜ 다연장로켓, 과거 북한이 운용하던 다연장로켓은 그것도 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것은 뭐 형편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 240㎜ 다연장로켓을 최근에 어떻게 개조를 했느냐?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정밀타격이 가능합니다. 원래 다연장로켓이라는 것은 군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역을 설정해 놓고 이 지역에다가 그냥 융단폭격을 하는 것이 다연장로켓입니다. 정밀타격하는 것이 다연장로켓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연장로켓은 정밀타격을 하도록 유도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사격도 했지요. 정확하게 십자를 그어 놓고 때리는 것도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다 믿지는 않습니다, 쇼라고도 보는데.

그런데 240㎜뿐입니까? 300㎜ 다연장로켓, 전 세계의 다연장로켓 중에 직경이 제일 큰 것이 300㎜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보유했지요. 공산권 국가들이 보유한 것인데, 그런데 처음에 300㎜ 다연장로켓 나왔을 때 저는 저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김정은

의 특성상 절대 저것은 저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바로 400㎜ 다연장 로켓, 600㎜ 다연장로켓이 나옵니다. 이것들도 다 유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600㎜ 다연장로켓이요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이라는 것을 장착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다연장로켓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를 투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량으로.

다연장로켓의 장점이 뭐라고 했지요, 아까? 융단폭격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융단폭격 할 수 있는 무기에다가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과거부터, 김정일 시대부터 김일성 시대부터 개발해 온 스커드 1·2·3·4·5·6형, 노동 1·2·3·4·5·6형, 화성-7형부터 화성-12형까지……

화성-11형은 최첨단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미사일 중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똑같이 모방한 것이 화성-11가형입니다. 우리나라 현무-1·2도 이것을 기반으로 만든 거지요. 아주 정확도가 좋고 가성비가 좋은 전술적인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겨냥할 수 있을 만큼 갖췄지요.

그리고 화성-11나형 이것은 미국이 가진 가장 우수한 전술, 지대지 탄도탄입니다. 탄도미사일이지요.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에이태큼스를 형상까지도 똑같이, 그 도장까지도 거의 똑같게 만든 것이 화성-11나형입니다. 이번에 이 화성-11가형과 나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서 실전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정확도가 형편없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정확도가—CEP라고 하지요—원형 공산 오차 100m 안쪽까지 들어왔답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팽창해 있는 북한군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내부 결속에 에너지를 쏟도록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바로 팽창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안보 상황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시 경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25% 기본 고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철강은 50%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철강업체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과연 생존 가능하냐? 우리 현대·기아 자동차 연간 100만 대 이상 미국 시장에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만 그렇지요. 그간에는 가격경쟁력이 토요타보다 좋아서 많이 팔렸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선호하고 정말 좋아했지요. 많이 이용했습니다. 과거 제가 현대에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팔리게 될 거라고 정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연간 100만 대 이상 팔릴 정도로, 물론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예외하고라도 말입니다.

이런 자동차들이 이제 성능도 너무 좋아지고 디자인도 너무 좋아지고 가격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애용을 했는데 이제 토요타보다 비싸지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15%로 인하받았지요? 우리는 아직 25%. 현대자동차의 소나타가 일본의 캠리보다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분들, 노동자분들, 자동차 많이 팔리면 많은 성

과급을 받습니다, 연초에. 성과가 많이 나오면 몇천만 원씩 받지요. 그런데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성과급이 당장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업은 돈을 못 벌어들이면 R&D라든가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R&D에도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에, 가뜩이나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일자리가 안 늘어나겠지요.

지금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한번 현장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기업들은 아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이런 온갖 반기업 입법들, 정책들 이것들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온몸이 꽁꽁 묶였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거기다가 언제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게 될지…… 우리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각오해라'.

오너들은 언제 구속될지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지요. 배터리셀 공장에서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했던 폭발사고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형 참사였습니다. 이런 참사에 기업의 CEO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할 때 애초에 생각했던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사고들은 일개 대표, 오너, CEO를 처벌한다고 해서 절대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이 정부가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일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지금 발달했다고 하지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발전한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느냐?' 그러면 과학을 잘 아는 과학기술인들은 말합니다, '태평양에 가서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푼 만큼 밖에 밝혀내지 못했다, 이 자연의 섭리를'.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에 이미 원리와 이치가 있고 그 원리와 이치를 인간이 알아 가는 것이 과학기술 개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평양만큼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중에 물 한 바가지 떠낸 것 정도밖에 밝혀내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과학기술이. 그런데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연한 사고, 진짜 예기치 못했던 사고들 예방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사실은 좌익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비롯되지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좌파는 다릅니다.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 인식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일종의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상의 좌파는 인간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했지요.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 최악의 실험이었습니다.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고 실패했습니다. 막을 내렸지요. 물론 그 잔재가 아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위쪽에 있는 북한 정권이 그렇고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쿠바가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포퓰리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지요.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원리에서 출발한 잘못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결코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의 사고 통계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이 모든 것이 증명을 해 줍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나서 한 2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회사들마다 기업의 대표들이, 기업의 오너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까 봐 밑의 사람들 그냥 엄청나게 닦달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자원이 투입되고 정말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안전에 관련된 설비들을 만들고 그리고 온갖 서류 작업에……

현장을 나가는데 중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것 안 하고 나가다가 걸리면 처벌받습니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무더운 여름날 중무장하고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죽습니다. 탈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장에 나갈 때는 2인 1조로 다니게 합니다. 2인 1조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들 바쁜데, 기업이 사람 인력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가라고 하면 누군가 한 명은 아무 일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직이 연구를 못 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50% 이상의 시간을 씁니다. 저도 기업에서 2년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었어요.

기업이 사용하는 돈과 에너지, 시간 이런 것들을 기업을 더 발전시키고 더 잘살게 하고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성과급을 주고 이런 데 투자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물론 안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인명피해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것은 그 작업자 개개인들도 정말 항상 긴장해야 되고,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중처법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통과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줄소송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 자동차가 그렇고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네이버,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들입니다. 아예 이제는 기업들이 로펌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줄소송들 대응하려면. 어떻게 회사에 있는 그 소규모의 법무팀만 가지고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로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내려가게 되면 경영진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들까지도 몇 년 지나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장은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지요. 거시적인 환경 변화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급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년 초에 받게 될 성과급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몇천만 원 받던 성과급이 없어지거나 몇백만 원, 일이백만 원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삶에 직격탄이 되는 겁니다, 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러니 현장에 나가 보면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노란봉투법만은 어떻게 좀 제발 막아 줄 수 없느냐라고 합니다. 107석밖에 안 되는 우리 국민의힘이 막을 힘이 없지요. 이 말이 경영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이. 그것도 이 말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정치 성향, 좌우 상관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웬만한 기업들에 가게 되면 사오십 대가 지금 현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오십 대 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주류를 이루고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오십 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우리나라의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듣고 계신 기자님들 또 국민 여러분, 정말 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없고 더 이상의 찬란한 번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반기업 입법, 정책들 그리고 고관세,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 같은 이런 거시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투자 불균형을 초래시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부터도 그랬지만 너무나도 기업하기 어려우니까. 창업하는 창업자들 커뮤니티를 가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는데 제조업으로 창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일 바보라고 합니다. 제조업으로는 창업을 하면 성공 못 하니까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제조업으로 창업을 하겠습니까? 있는 제조업들도 일하기 힘든데.

가능한 한 지금 기업들은 국내 사업장을 축소하고 해외로 짐 싸 들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취직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서 큰 이슈가 있었던 SPC 있지요. 잘 아실 겁니다. SPC 국내 사업장의 반죽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 반죽하는 설비에 사람이 끼어 가지고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고로 너무 심하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SPC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반죽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신 빵, 케이크 전부 우리나라에서 반죽 안 합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다 반죽해 오겠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탈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 이 스마트한 청년들, 이 인재들의 탈한국도 부추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미래가 뻔히 보이는 어려운 환경의 대한민국에서 취직하고 대한민국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려고 하겠는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대기업들도 어려워하는데 낙수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대기업에 딸려 있는, 삼성·현대·LG·포스코·현대제철 이런 많은 우리

대기업들이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지요.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언제까지 이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딸려 있는 수많은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 이런 기업들부터 당장 영향을 받습니다. 매출에 영향을 받고 아마 정리해고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이들 하나만으로 끝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부터 지역상권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말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 교만입니다.

시장을 통제하겠다고 자꾸 손을 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시장을 통제했는데 오히려 집값이 네다섯 배 폭등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미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 새로 집을 장만해야 되는 청년들,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은 저렇게 오르고 물가는 이렇게 오르고. N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얘기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집을 사겠다고 엄두나 내겠습니까?

전 국민 지역상품권 지급, 지금 2차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현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돈이 썩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빚내서 주는 건데, 이게 지금 내가 받을 때는 당장 재래시장에 가서 뭘 사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나중에는 그 높아진 물가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내가 받은 그 몇십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세금으로 더 많이 뱉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호텔경제학이지요, 호텔경제학.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이제 사회에 정착해 가지고 자기 삶을 준비해 가는 청년들이고 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이것 전 국민 지역상품권 왜 주는 거냐고, 도대체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데 왜 주는 거냐고. 이것 다 나중에 세금으로 뱉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더 많이 뱉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포퓰리즘성 예산을 대책 없이 풀게 되면,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해서 기획예산처를 기재부에서 떼 내 가지고 총리실 산하로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정부에 따라서, 정부가 포퓰리즘성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기재부가 견제해 왔는데 이 기획예산처가 총리실로 가게 되면 이제 고삐가 풀린 겁니다. 이제 천장이 뚫린 거지요.

2016년, 2017년 그때까지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600조 정도 됐습니다. 박근혜정부 때까지 정부 부채의 상승이 아주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관리가 잘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 만에 아주 가파르게 상승해 가지고 1000조를 뚫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가부채를 가까스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완만하게 멈춰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이 정부조직 개편안대로라면, 지역상품권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지금의 이런 행태대로라면 또다시 가파른 상승이 이 정부에서, 이 정부 5년 끝날 때쯤에는 국가부채가 2000조가 되어 있을까 2500조

가 되어 있을까 예상이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은 점점 더 퍽퍽해져만 가는 겁니다.

국회의장님, 혹시 화장실 잠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 소개로 부산 수영구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가 아주 조용해서 좀 신기하시지요? 앞에서 발언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국회 진행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서—여당 중심으로 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야당 국민의힘이 그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무제한토론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박충권 의원이 지난 9시 54분부터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계속 토론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가야 되겠다고 해서 화장실 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충권 의원이 계시지 않은데 조금 있으면 들어올 테고요.

이게 지금 3일째 무제한토론을 계속하고 있고 이 무제한토론은 24시간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밤을 새워 가면서 하는 건데 의원들은 조를 짜서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은 진행되는데 의원들이 많이 안 계신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조금 지나면 박충권 의원이 들어와서 토론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부산 수영구에서 오신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를 했으니까 인사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박충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박충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 휴일인데 또 이렇게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또 필리버스터 이렇게 하는 것을 방청해 주러 오셔 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5일에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 개편에 관련한 법안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법안들,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하고 거기에 따르는 하위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지요. 어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저녁 한 7시 반쯤. 그리고 그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정부조직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제가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원까지 제가 좀 설명드리기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 법안들을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통과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이 법안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토론회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긴 하지만 이게

하위법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큰 것이 검찰을 개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거의 70년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와 그리고 범죄 예방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약을 해왔던 검찰조직이 어제부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 공소청으로 남았지요. 한 2300명 정도의 검사분들과 1만 1000명 정도의 수사관분들 다 한날한시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단연코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안이 좋은 이런 나라가 되는 데 기여했던 것이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었던 형사사법체계가 아니었는가 이런…… 물론 문제점도 많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서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 어떤 특정 정치세력의 하수인이 되었다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을 사시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이도 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완벽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신이 창조한 자연에 존재하는 만물밖에 없지요. 그 이외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제도 또한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운용하다가 단점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완해 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것이 인류 역사였고 우리 근대 역사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증명이 된 가장 선진 시스템이고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국민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더라, 여러 가지 입헌군주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며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해 봤지요, 봉건제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가장 우수한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

그래서 당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었던 미국, 약 이백몇십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 체제가 출범을 했지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파운딩 파더(founding father)들이라고 불리시는 건국의 아버지들, 이분들이 미국에 제도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하게 삼았던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경험주의를 아주 중시했다.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영국에서 넘어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상륙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권력의 핍박을 받지 않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해서 온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서로 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이 땅에 상륙하는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하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을 가장 큰 원리 중의 하나로 삼지요. 그래서 권력분립이라는 제도가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은 견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제도들은 도입함에 있어서 경험주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검증이 된 제도들만을 채택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있었던.

그래서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았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시스템들만을 골라서 받아들였고,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또 정말 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 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고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정말 급하게 충분한 논의와 숙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시행착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의 비가역적인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무역전쟁, 미중 패권 전쟁, 과학기술 패권 전쟁 이렇게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여건도 좋지 않은데 잘못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삐끗하면, 잘못하면,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국가대개조 프로젝트, 국가시스템 체제 개조·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가, 검증도 안 된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예상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민생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77년 전이지요, 우리 선대 세대들께서, 정말 현명하신 선대 세대들께서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36년간 일제의 식민지배가 갓 끝난 이 대한민국에,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그런 땅에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무를 우리 선대들께서 심겠다는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을 살아가 보면 다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국민성과 민주의식과 애국심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인가. 고도의 글로벌 선진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정말 문맹률이 그렇게 높고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봉건체제에서 바로 식민지로 넘어갔다가 갓 해방된 이 조선 땅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고도의 발달된 사회 시스템을 놓으려고 결단한 그 선대 세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이런 시도를 할 것인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면서 또한 그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험을 무릅쓴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삐끗하면 독재로 전락할 수 있고 잘못 삐끗하면 북한 정권을 비롯한 외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 정말 위태위태로운 그런 시스템을 세웠던 겁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어떤 동력이 작용했을까?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감히 예상을 해 보면 정말 더 이상 외세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남들처럼 잘 사는 그런 선진 강국을 이 대한민국 땅에 만들고 싶은 뜨거운 애국심, 오로지 그 애국심 하나로 그런 용단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남한을 향해 끝도 없는 도발을 하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나 무너뜨려 보려고 정말 음으로 양으로 획책하고 있던 그 위험한 시기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수많은 애국영령들의 피와 살로 기초를 놓고 일궈 내고 지켜 내고 계승·발전시켜 온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수천 년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찬란한, 이렇듯 찬란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77년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갈가리 찢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해서 이 정부조직법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보고 또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70여 년 역사를 가진 검찰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왔던 우리의 수십 년 역사의 형사사법체계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갈가리 찢겨져 가지고 오체분시됐습니다. 정치검찰, 물론 많은 잘못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그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했다고 하는 최첨단 전투기들도 사고가 납니다. 최첨단 자동차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도 사고 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다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검찰을 우리가 정치검찰이라고 해체시켜 놨는데 그리고 그 수사권을 사법경찰과 중수청과 공수처와 행정부 산하 조직들로 집어넣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체계를 갖추겠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수사권을 행정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그런 조직들에 집어넣으면 과연 그 사법경찰이, 중수청이, 공소청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숙의와 토론, 논의,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로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분담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 있는 2300명의 검사들과 1만 1000명의 수사관들, 이들의 거취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의 주역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렇게 빈 공백……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께서 지난 정부조직법이 올라오던 날 17시간 15분이라는 최장 기록을, 스스로 세우신 15시간 50분의 기록을 깨면서까지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하셨는데 그때 박수민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신구폐라고. 먼저 새것을 만들고 나서 낡은 것을 허물어야 된다, 새집을 짓고 나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한 다음에 낡은 것을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집이 없고 낡은 집만 부쉈을 뿐입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서민들과 약자들을 괴롭히는 민생범죄 수사·재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겁니까? 한없이 지연될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수많은 수사에 많은 차질

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금만이라도 들어 보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사법경찰 간의 업무 핑퐁으로 재판 지연은 일상화될 것이 정말 불 보듯 뻔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곳들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민원 상담을 받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연락해 보십시오', 저쪽에 연락하면 '이것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 봤고 그런 업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속 시원한 민원 상담이 안 되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정치인인 저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상당히 복잡한 수사 조직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개편되는 이 수사 조직의 개략도를 한번 국민 여러분께, 제가 미처 패널을 준비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 작은 사진으로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대략 이렇게 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기존 검찰 조직의 개요도입니다, 어떻게 검찰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단순하지요. 아주 심플하게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기관에게 어떻게 수사를 받고 있는지,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를 의뢰한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이 수사 조직, 너무 복잡합니다. 정치인인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된다, 내가 만약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랬을 때 도대체 이건 어디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곳에서 수사를 받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사를 받는지,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수사를 받고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누가 그 결과에 어떻게 승복을 하며 민생범죄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의문입니다. 이 조직을 보고 있게 되면 정말 듣도 보도 못 한 공상과학 소설 속에 있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22대 총선에서도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 많은 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산술식이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의석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국가조직을 심플하지 않고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국가는 효율이 떨어지고 나라는 경쟁력을 잃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좀 더 작은 정부, 좀 더 효율적인 정부,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신속한, 민첩한 공공기관들 그리고 정부조직들을 만들어서 민생에 빠르게 대응하고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 이런 것들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벼운, 민첩한 그런 정부조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무겁게 만들어 놓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

까? 경쟁력은 점점 잃어 갈 것입니다.

기재부 개편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서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재부 개편은 대한민국을 아주 빠르게 포퓰리즘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예산 기능만 뚝 떼 가지고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집권 여당의 마음대로 예산권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집권세력 입맛에 맞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편성이 난무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재부가 그대로 있는데도, 전 국민 민생쿠폰이 벌써 2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총리실 산하로 기획예산처가 넘어가게 되면 과연 그 견제를 누가 할 것인가, 지금까지 기재부가 그나마 어떤 포퓰리즘성 예산편성을 견제해 왔는데 그 기능이 마비될 것이고 유일한 견제 정치세력인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107석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도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협의와 논의와 이런 것도 없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상임위에서 논의도 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시키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편성을 우리가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과거 2024년 12월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그 예산 폭거를 막아 낼 수 없었습니다. 정권도 갖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야 더 말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정도까지, 박근혜정부 때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던 국가부채, 당시까지만 해도 한 600조 수준 됐던 그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단 5년 만에 1000조 원을 뚫어 버렸습니다. 아주 가파른 상승이었지요. 그때는 정상적인 정부조직을 갖고도 이렇게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 기능이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국가부채가 이재명 정부 5년 지나면 2000조가 될지 2500조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통과가 됐지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한 사람 쫓아내겠다고 멀쩡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없애 버리고 본질적으로 거의 다르지 않은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을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법을 바꿔서 해임하는 것이거 행정권에 대한 입법부의 침해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거지요, 입법권으로 행정부 국무위원을 해임하는 것.

국무위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하지 못하니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입법으로 멀쩡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입법으로 해임을 하는 거지요.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말 오늘날 방송미디어산업 환경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요. OTT,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나 정책이게 변화는 없고 단순히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5명 위원의 수를 7명으로 늘리는 것 이게 바뀐 것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조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데리고 온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멀쩡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별로 다르지도 않은 이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을 만

드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입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법의 통과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어제 27일 7시 반쯤 이 법이 통과됐지요. 그렇게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다 보면 곧 얼마 머지않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도 눈엣가시 같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 3법,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를 몇십 년 퇴행시킬 수 있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 수 있는, 어용방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민주노총과 민주당에 의해서 영구 장악될 수 있는 그런 악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악법이 어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해서 곧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 환경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기 어렵지 않을까.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서 방송은 영구히 장악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의 사전 검열과 사후 검열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양심적인 언론은 이제 입틀막 당할 것이고 국민들은 정말 조작되고 편향된 뉴스들에 노출되는 것이 아마 일상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아주 슬그머니 빼 버린 내용이 있는데 원래 애초에 올라온 법안에는 금융감독기관을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총 4개로 사분오열을 시켰었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었었지요. 정말 옥상옥 감독 체계로 금융시장에 일대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좌절됐지만. 이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 종사자들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 움직임에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카드뉴스를 만들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카드뉴스들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윗선에서 자리를 만들려고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이 국민의 신뢰를 지키려면 반드시 관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체계 개편은 결국 제2의 IMF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이 개편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다행이지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걸 금융감독원의 금융 종사자들이 강하게 들고일어나면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면 대다수의 모르고 있던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들짝 놀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 안을 슬그머니 뒤로 뺀 것이라고 봅니다. 더 키웠다가는 다른 체제 개편안들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간밤에 든 도둑도 아니고 슬그머니 이렇게 국민들 몰래 넘어가려고 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지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안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들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증폭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그간 우리 사회에 에스컬레이트(escalate)된 젠더 갈등, 이런 젠더 갈등 조장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이루어질 수가 없었지요.

그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개편하면서 헌법상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그 양성평등 개념마저도 부정하고 성평등 개념을…… 국가기관이 공식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더 큰 사회적인 혼란을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안보를 더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 경제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청사진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시기에 과연 정부조직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들고 프랑켄슈타인같이 오체분시해서 이곳저곳으로 뜯어다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고 어떤 시급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정말 너무나도 우려가 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가.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정말 거의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 가지고, 야당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은 없습니다. 진실은 세상에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급격한 혁명과도 같은 일들이 도대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그 결과가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도 조언을 드립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것은 재고해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제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 우리가 깊이 숙려해 봐야 된다, 할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검찰개혁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근간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변화는 국민의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법들, 저는 악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들이 가져올 법적 행정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정말 앞으로 시간을 들여서 조목조목 한번 짚어 볼 것인데, 특히 검찰청 폐지 그리고 기후환경부 신설 이런 것들이 초래할 심각한 부작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들, 이게 뭘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그것을 필두로 이번에 올라온 네 가지 법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타협의 과정 그리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

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권력에 의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협치를 포기한 그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긴급 회동을 거쳐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갑자기 삭제했습니다. 슬그머니 뺐지요. 이처럼 중요한 정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인데 이것을 반발에 부딪친다고 해서 본회의 직전에 갑자기 뺀다, 슬쩍 뺀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 법안들이 얼마나 철저한 숙의와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인지,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미완성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이지요,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원천무효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때. 그런데 당시 논평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작은 정부 원칙과 국민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당시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조직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은 여야 간 신중한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됐다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은 DOGE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더더욱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있지요.

오히려 우리는 미국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조직을 더더욱 작게 만들어서 민첩한 가벼운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권력을 더더욱 키우고 있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중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의 조직입니다. 규모 비율로 따지면 북한의 정부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거대하고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이 가실 겁니다.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국민은 점점 더 못살게 되는구나, 나라는 더더욱 경쟁력을 잃어 가고 국력을 잃어 가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너무 작아도 안 되지만 적당한 최소 사이즈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는 이 개정안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그런 힘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일반…… 인민민주주의와 다른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만 그 다수의 힘이 너무나도 우세해져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면 그것은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결이 원칙이고 다수결이 존중돼야 되지만 소수의 의견 또한 그에 못지않게 존중돼야 되는 것이,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이지요.

이런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는 단순히 입법 과정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적 절차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정부조직 개편안들 앞으로 뒤따라올 하위 법령들 개정하는 것이 정말 많이 뒤따라올 텐데 이런 것들을 정말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졸속으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진실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이렇게 간밤에 도둑 들듯 조용히 해치운 이 결과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도대체 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와 신뢰는 추락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입법부를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라고 판단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혼란과 부처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업무 분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퇴색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점점 더 공공기관을, 정부 조직을, 정부기관을 믿지 않을 것이고 도대체 공무원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런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365일 고생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도 비판을 받는다면 과연 이게 타당한 일인가, 입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놔서 되겠는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의를 해 드리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생체실험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처를 쪼개고 떼 내서 다른 부처에 갖다 붙이는 이런 행위, 그래서 정말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 원래 행정부는, 국가 정부 조직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잘라 붙이고 이어 붙이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 조직의, 행정부의 유기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재정과 예산 기능의 분리를 놓고 보면 분리와 통합,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행정적 실험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지요.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지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재정과 예산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했었는데 10년 이상 지속된 이 실험은 사실상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그리고 부처 간의 갈등 심화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책임성 약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재통합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실패로 증명이 된 행정적 혼란을 국민 세금을 들여서 다시금 초래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은 건국 당시에 권력의 분립을 가장 핵심 가치로 두고 정부조직을 만듦에 있어서 그리고 시스템을 들여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미국은 헌법을 만들고 나라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그 이백몇십 년 지나는 동안 거의 수정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만큼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 엄격한 토론과 논쟁과, 정말 전쟁과도 같은 토론과 합의와 숙의와

양보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겁니다. 이 토론의, 진짜 열띤 토론의, 성역 없는 토론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의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번영을 이끌어 왔던 많은 요인들 중에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당시에 대륙회의라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대륙회의를 참관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정말 살벌한 토론을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했다고. 그리고 그 대륙회의 토론 과정에서는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가 항상 병행됐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병행시키는 것은 그겁니다. 공개 회의로만 하게 된다면 절대로 토론과 협의와 그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누구에게 지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나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토론 과정을 국민 모두가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민주당의 어느 의원님이 만약에 토론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저도 어떻게나 이겨 먹으려고 할 것이고 상대 민주당의 의원님도 저를 반드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와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 회의라는 것이 있고 대부분의 법안소위들, 소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더 발전된 안을 만들어 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1당 국회도 아니고 107명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버젓이 있고, 저기 혁신당도 있고 그리고 개혁신당도 있고, 여러 야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것을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만드는 것, 신설하는 것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도 지금 확대한다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과정에서도,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부작용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하는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살아 있는 서슬 퍼런 권력 때문에 다들 몸을 숙이고 입을 닫고 조용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민심이 달라지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레임덕이라도 찾아온다면 그때 들고일어날 반발 이런 것들 감당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 개편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정치적 명분에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법안의 행정적 문제점은 단순한 기능적 비효율성을 넘어서서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시스템을 무리하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그런 시도로 읽히는 것입니다.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국가의 틀이 너무나도 손쉽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그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조직개편은 각 부처의 기능을 파편화시키고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업무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는 부처 간 갈등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를 심화시켜서 행정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돼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급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조금 유동적이기는 한데, 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님께서 순서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여기 국회에 계신지, 그다음에 우리 당의 이종욱 선배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만약에 필리버스터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종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우원식 김남근 의원이 1시 10분쯤 국회로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충권 의원 1시 10분쯤입니까?

○의장 우원식 예.

○박충권 의원 제가 그러면 한 1시 반까지 할까요, 의장님?

○의장 우원식 좋을 대로 하세요.

○박충권 의원 제가 다 할 수도 있지만 또 하시고, 의견들을 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자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조차 여야가 서로 간에 입장을 말하고 의견을 내고, ‘우리는 이래서 하려고 한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내고 논의를 해 보고 또 국민 앞에서 판단을 받아 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조직을, 정부 조직을 이렇게 충분한, 엄격한 검토 없이 마음대로 뜯어 갖다 붙이고, 분리했다가 붙이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부처 간의 갈등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행정적인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조직은 가능한 한 심플해야 됩니다. 회사를 가 보십시오. 회사들도 가능한 한 회사 조직을 가볍게 하기 위한, 민첩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보스턴컨설팅이나 베인앤컴퍼니나 이런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조직을 가볍게 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CEO가 대통령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CEO가 행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 조직이 무거워지고 경직되고 비대해지고 비용만 잡아먹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되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창의력도 안 나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안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대해지고 거대해진 조직에 붙어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 정치권을 정말 면밀하게 주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정치권이 맨날 싸움만 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정말 꼴 보기 싫은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국민께서 정말 외면하시고 더럽다고 하실수록 저는 이 정치권이 점점 더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럽게 여겨지는 정치권에 어떤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더 우수하고 능력 있는…… 어떻게 보면 회사 조직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CEO라면 이 국회는 이사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 이사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줘야 되는데…… 국민께서 이곳을 더럽다고 하실수록 정말 더러운 사람들만 모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야망만 가득한 사람들, 자기 이익만 가득한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정말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능력 없고 권력을 누리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곳에 모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회사는 점점 더 능력 없는 CEO들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중에 더 우수하고 능력 있고 애국심으로 가득하게 무장한 그런 정치인들이 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애국심을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나갈 수 있도록, 찬란하게 번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갈 길을,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청 폐지가 되게 되면 당장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 우선은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사 공백과 역량 약화, 수사 역량 약화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분리는 중대범죄의 수사 공백과 국가 범죄 대응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에 경쟁이 발생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핑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과 책임 불분명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스코프(scope)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되면 좀 괜찮은, 좋은 수사권은 서로가 가져가려고 할 테고 해 봤자 별로 득이 안 되는 것들은 자꾸 밀려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 수사했다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공무원……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무원들께서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말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정말 큰 꿈을 갖고 공무원 조직에 들어와서 그 꿈을 펼쳐가기 위해서 커리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삐끗해서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꿈에 지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해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점이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배당이 된다 그러면 가능한 한 떠넘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핑퐁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 그리고 책임 불분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행위 자체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법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판단할 경우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만약에라도 양산이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송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고도화된 전문 범죄집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개개인의 역량 수준 플러스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어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지금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축적된 이 노하우와 경험들 그리고 이 역량들은 어떻게 하면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부작용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덜어 낼 것인가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방향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복성, 보복과도 같은 이런 느낌으로 오체분시해서 갈갈이 찢어 놓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 1등의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 그런 어떤 고도화된 범죄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 증권, 기업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은 진짜 복잡한 법리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협업 체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면 수사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작용은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지요. 수사지휘권 공백 문제입니다. 전국 2만여 명에 달하는 특사경은 경제, 노동, 세무 같은 전문분야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들이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가 되게 되면 이들의 수사 지휘 주체는 모호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검찰과의 접점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수사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특히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일반 공무원 신분의 특사경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법조항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브로드(broad)해서 현장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변호사들과 로펌과 많은 법 전문가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법리 해석이 까다로운 그런 사건들을 다룰 때 검사와의 협력이 배제되면 수사 현장에 너무나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들에, 법무팀이지요, 회사들 법무팀에 법률 자문이 올라오는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수량도 엄청 많고요. 지금 기존에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법무팀만으로는 정말 법률상담이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으로 됐고 그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회사들은 법무팀의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인원도 더 많이 뽑아야 될 것이고. 어쩌면 로펌 하나 새로 만드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부를, 정부조직을 가능한 한 좀 더 작게 해서 권력을 최소화시키고 조직을 가볍게 하고 민첩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권력이 비대해지고 더 커지고 무거워지고 비효율적으로 되는 과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꾸 국가를 회사 시스템에 비유를 하는데 회사 조직들은 창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조직이 커질 때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조직은 점점 비대해집니다. 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 직원 수가 5명일 때 그리고 10명으로 증가했을 때 그 10명이 30

명이 됐을 때, 100명이 됐을 때 그리고 1000명이 됐을 때, 1만 명이 됐을 때, 10만 명이 됐을 때 그 조직은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혁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계속해서 조직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가능한 한 가볍게 해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점점 비대하게, 복잡하게, 무겁게, 비효율적으로 느리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잃어 간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결국에는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권력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청 폐지의 취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의 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력의 비대화와 조직에 대한 견제 약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이관될 경우에 경찰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지겠습니까? 사법경찰까지,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경찰이.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한, 막강해진 괴물 조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행정부 산하 조직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가는 조직이 될 텐데 이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경찰 수사 조직이 정말 독재 강화를 위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표적화된 수사와 정치적인 수사들을 하게 되면 이 무시무시한 조직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또 수사기관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게 되면 그 기관은 자기가 맡은 사건만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만을 우선 처리하고 다른 기관의 영역으로 그 사건을 넘기는 경향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검사, 검찰이 뺏어 간다든지 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방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조직들로, 중수청 사법경찰 공소청 공수처 이렇게 많은 기관들로 분리가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석 안 해봐도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기관 간에 경쟁과 책임 회피, 경쟁을 해서 기관들마다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안이 의도한 견제와 균형 대신에, 법안은 그렇게 의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수사권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행정부에 집중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지요.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상상해 보십시오. 검찰보다 훨씬 무서운 조직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 절차의 비효율성과 복잡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다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지요, 반발하고 계시고. 특히나 검찰청 폐지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수사가 미비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완수사권, 그 시스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 절차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말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사건의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게 되면 경찰이 미흡한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이것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강제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이 되는 거지요. 결국 사건처리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더더욱 심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잡하게 나뉜 이 제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구제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매 단계마다 변호사들을 선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법비용이 결국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건의 수사를 받거나 사건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소송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그 비용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께서 그런 사건에 휘말리면 안 되지만 만약에라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더 많은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또 위헌성, 그러니까 헌법과도 충돌하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금번 개정안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인 거지요. 헌법 제89조제16호는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총장 직위의 헌법적 지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조직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와 법원 등과 같이 헌법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상 기관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가장 최상위의 법률인 헌법상에 있는 헌법기관을 폐지하고 그 명칭과 실질적인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헌법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합참의장 명칭을 변경하려다가 위헌 지적으로 포기한 그런 선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혹시 몇 시간 하실 예정이십니까?

(◯김남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래 박충권 의원님이 한 10시간 한다 그래서 저녁 때나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너무 일찍……)

아니, 제가 10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김남근 의원 의석에서 — 조금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 원자력 산업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 뜯어다가 붙이는 것, 이것은 산업과 환경의 모순을 제도화하는 그런 무책임한 통폐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그리고 또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 물질들 그리고 산업폐기물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들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런데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결국에는 대부분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에너지 부처를 환경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환경규제 부처에다가 집어넣는 것, 이거는 충돌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두 조직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겠지요, 머리가 앞뒤에 붙어 있는 괴물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뒤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되는 것을, 이렇게 충돌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붙여 놨는가. 저는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괴물 부처에서 환경규제의 논리는 결국에는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환경을 중시하는…… 어떤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환경을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탄소중립 2050 이런 것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지요. 결국에는 더 많은 원전들이 건설돼서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더더욱 싸졌으면 국민들의 전기료도 더 싸지고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 전기료도 싸져서 대한민국의 제품 경쟁력이 훨씬 좋아졌을 텐데, 좋아지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 두 부처가 합쳐지게 되면 환경규제 논리가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전력망 확충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환경규제로 인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곳은 원자력 생태계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의 핵심, 그렇게 되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AI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AI 100조 투자 이런 것도 하고 AI 개발 국가대표를 뽑는 그런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AI산업에 있어서도 전력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데이터센터들이 잡아먹는 전력은 거의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만큼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에서 제조원가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60%에 달합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첨단산업들이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때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정전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영국이 2008년에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출범했다가 전력 공급 부족과 도매가격 폭등, 제조업 약화라는 후폭풍을 겪고 2023년에 에너지안보 중심의 부처로 재편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지요.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확인된 이런 실패의 길을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유럽에서는 친환경을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대규모 친환경 프로젝트를 하면서 탈원전 하고 재생에너지를 도입했던 나라가 독일 아니겠습니까. 독일에 겨울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독일을 여행 가게 되면 식당 같은 데 들어가도 너무 춥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 난방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다 친환경 기조로 돌아갔다가 다시 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발전 공기업들의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와 고용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서서 지역경제 그리고 고용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즉 국가의 핵심산업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위협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사회의 경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모두 파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이 시도, 이 발상이 저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탈원전 시즌 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표면적으로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장악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래서 원전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존에도 원전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가 수출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이 3개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정책의 유기성과 일관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해외시장에서의 국가 협상력이라든가 우리 원전의 수출 경쟁력은 상당히 악화될 것입니다.

국내의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 이런 것들은 수출 경쟁력하고 직결이 되는데 부처가 분리돼서 현장에서는 3개의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그런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그중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처는 규제기관입니다. 기후환경부가 되겠지요. 이것은 결국에 우리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킬 겁니다. 수출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내에도 새로운 원전을 짓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백지화되게 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최소 15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되는 어떤 이념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 설계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믹스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히 원전산업 생태계 하나가 손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삶,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그리고 산업에서는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로 인해서 우리 제품,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규제 부처에 종속시켜 가지고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원전 시즌 2가 아닌가. 더 비싸고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정말…… 지난 2023년인가 2022년인가요, 전기료가 한번 급격하게 올랐지요. 값싼 에너지원이 확충이 안 되니까 한수원이 적자를 탈피하려면 결국에는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와 미래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적 전환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은 명확한 수치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2038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각 발전원별 생산단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발전원을 원자력과 태양광 그리고 해상풍력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비교를 해 드릴 텐데, 2038년이 되게 되면, 그 기준 전망치를 보게 되면 kWh당 발전단가가 원자력은 66.4원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200원대가 되겠고 해상풍력은 400원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은 원전에 비해서 발전단가가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은 6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에너지 포트폴리오 설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지 않으면, 원전 하나 건설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정말 우리 미래산업 경쟁력에 직격타가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6.9%에 달하는 그런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원, 발전원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그리고 원자력에 사용하는 우라늄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이 우리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5%가량 낮춰 주는 그런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 위험을, 에너지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안보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은 간헐성과 변동성이 극심한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과 같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 공급을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시대에 적합한 전력원은 원전뿐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처 통폐합 그런 실험은 결국 친환경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이런 두 가지 시대적 명제 사이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해 가는 데 오히려 한쪽을 희생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3년 만에 70% 이상 인상되었던 그런 전례

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개편안 역시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이 감당해야 되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 이것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기조로 간다면.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정말 중요한 기초 체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기능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의 확대와 신설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고 전력 수급 불안정과 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안 그리고 그에 따른 하위 법령들에 대한 개정, 오늘 올라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하위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의 한 5시간 되는 시간 동안 짧게나마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안팎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순간에 이렇게 충분히 숙의가 되지 않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더 가벼워지고 더 민첩해지고 더 민생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팬시하고 정말 우수한 정부조직을 만들기는커녕 프랑켄슈타인 같이 뜯어서 이어 붙이는, 더더욱 비대해지는 이런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는 도대체 변화하는 이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경쟁력을 갖춰 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우리 야당과도 논의를 하시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받아들일 조언은 받아들여서 기왕에 하는 것 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더 미래의 경쟁력을 갖춰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단순히 발목 잡기 하려고, 단순히 방해하려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이 개정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기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증명이 된 충분한, 정말 효율적인 그런 우수한 시스템들을 가져와서 충분한 논의의 장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정치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알려 드리고 국민께서 이곳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께서 원

하셨던 것인지 판단해 달라 그런 말씀, 그것이 국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께서 이것을 막아 내는 데 도움을 주시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그만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님의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의 얘기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원식 박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남근)

(13시42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김남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법에 대한 찬성의견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필리버스터를, 그것도 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나?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유상범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다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국회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의 전제가 됐던 정부조직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법은 먼저 이루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된 정부 부처라든가 업무가 좀 변경된 그런 정부 부처를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것인가 또 상임위원회에 새로 배정된 정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여야 사이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다 정부조직법에 대한 비판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정부조직법은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서 결의가 된 상태이고 또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충분히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국회 본회의까지 다 통과된 법을 다시 비판하기 위해서 그와 별개의 국회법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는데 찬성하지 않은 국회법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국회법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렇게 나오실 겁니까? 그러면 필리버스터라는 게 너무, 인과관계가 점점 넓어지는 것 아니

겠어요?

인과관계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먼 인과관계들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출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법안을 붙잡고, 다른 법안을 붙잡고서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다 보니까, 이번 본회의를 하기 전에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한 5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민생 법안이다 해서 합의해 가지고 여기 본회의에 상정까지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정부조직법 통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필리버스터가 너무 무한하게 확대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결국은 아마 국회의장님께서도 고심을 하셔 가지고 이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이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생 법안일수록 우리 경제적 약자들, 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염원을 결국 국회가 제대로 제때에 충족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는 그냥 아무 때나 땡깡 부리듯이 막 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것이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자신들은 장외로 나가서 장외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와 지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 1851년경쯤에 미국에서 등장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름이 버스터라는 게 난폭하다는, 해적질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진…… 버스터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이게 초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 매우 부정적인 용어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를 보니까 미국 남부지방에서 이미 연방정부가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중앙정부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던 집단들을 그런 버스터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막 난동을 부리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필리버스터라고 명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의사 방해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좀 합법적인 방식의, 합리적인 방식의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것도 소수의 의견들을 위해서는 좀 용인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반성적 고려가 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보듯이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지 이렇게 막 남용돼야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반드시 토론이 진행 중인 그 의제하고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국회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 다 통과돼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국과 같은 선진적인 정치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범위들을 넘어가는 그런 식의, 필리버스터를 분명히 남용하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선진적인 정치를 밟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남용하는 그런 제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토론 중인 쟁점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표결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승복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부정하던 것에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게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서 우리도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표결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또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전체 5분의 3이 모여 가지고 표결을 해야만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또 많은 일정들을 국회의원들이 취소를 하고 모여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국회활동,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정치활동들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방식들을, 가끔 가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이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필리버스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필리버스터의 남용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필리버스터에서 딱 의미 있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또 오늘같이 맥 빠진, 국회법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는 얘기들 얘기하다가 나가고, 와 가지고 책 갖고 와서 책 읽고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국회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뜨리는 방식의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

장님도 조금 필리버스터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난, 안전, 생명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의 법안에 대해서, 그런 긴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또 아예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법 같은 게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돼야 되나요? 국회법은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의 절차에 관한 것이고 또 이번 국회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미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된, 재정경제부 이렇게 하니까 상임위 이름에도 재정경제가 들어가도록 하고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이름이 바뀌니까 상임위에서도 지식재산처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하에 둔다 이런 식의 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잘 활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또 박충권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국회에서의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국회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걸 처리하면 전부 형식적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전부 민주주의가 아니고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식이 되니까 그게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민생 개혁의 입법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건 숙의민주주의, 딜리버레이티브 데모크라시(deliberative democracy)를 기본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충적인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표결도 하는, 다수결에 의한 표결도 하는 것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위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쟁점이 정리가 됐는데도 어느 한쪽이 발목을 잡으면서 최종적인 합의를 거부한다고 그러게 되면 마냥 시간을 끌면서 개혁의 시기, 입법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있어서는 다수결에 의한 표결을 통해 가지고 최종 처리를 하는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을 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정치학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숙의민주주의를 충분히 하지 못했나? 일단 대부분의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법안들이 넘어오고 있고 그게 90% 이상이고, 그런데 어떨 때는 정부조직법같이 정부가 출범한 지 이미 100일이 됐는데도 정부조직의 법적 체계를 못 만들고 있을 때는 그 시점에 제때 처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긴급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토론을 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서 처리하는 것들이 민주주의, 효율적이면서도 충분히 의견들을 합의를 이루어 내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체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되시는 게 국회의장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마구잡이로 직권상정하고 이런 것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고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당이 상정을 요청드리더라도 '조금 더 논의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상정을 좀 미루시기도 하고, 그래서 더 논의가 됐는데도 최종적인 합의를 못 보고 이 시점쯤에서는 어떤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2대 국회야말로 이런 숙의민주주의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때 처리해야 될 법안들, 제때 처리해야 되는 민생 법안들, 개혁 법안들은 그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잘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국회 지도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소 서로의 불만들이 있을 순 있겠지만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 가면서 충분한 토론과 또 필요할 때는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잘 처리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합의를 보지 않고 처리한 건 전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좀 과도한 주장이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학적인 이해들이 조금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애써 그것을 외면하시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김병주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김병주 의원님만 동의를 하십니까?

이연희 의원님은 동의 안 되세요? 민주주의 원리……

(○이연희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 있는 국회의원님들만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보편적인 그런 정치적 원리,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을 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나름대로는 그런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또 그러면서도 필요하면 제때 처리할 것들은 처리하는 그런 국회 운영 절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장외로 나가신 것 아니에요? 장외에 나가서 또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은 보수든 진보든 적어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서의 기본적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 가면서 장외투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장외에 나가서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헌법의 민주적 기

본질서를 공격했던, 법원도 공격하고 법원에 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혐오하고 조롱하고 이랬던 분들 아닙니까? 필요하게 되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정치를 하시게 되게 되면 어떤 정치적 안정, 우리 헌법의 기본 테두리 안에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야당이 한쪽의 보수 정치를 대변하시는 분인데 보수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헌법을 수호할, 어떻게 보면 헌법 수호라는 게 보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 수호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념, 보수 정치의 철학을 내버리고, 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는 극우세력과 손을 잡고 그들의 힘들을 키워 주는 방식으로 장외투쟁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저는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비판받을 그런 것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게 극심해지면 우리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국회에서 토론할 것들은 토론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또 제때 처리해야 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은 같이 처리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장으로 다시 돌아와 주실 것들을 기대를 하고 또 가능하면 그런 극우세력들이 이미 국민의힘 내에 많이 침투해 와 있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헌법 수호,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겠다는 보수 정치의 어떤 본령의 모습들을 좀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기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대다수는 적어도 보수 정치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적 민주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소양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만나 가지고 그가 상당히 극우적인 세력들을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고 또 그에 따라 들어온 세력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보수 정치의 본령, 헌법질서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본령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하시는 것 같고 정부조직법에서도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로 한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국가, 그에 앞서서 어떤 근대 민주주의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제도라는 걸 처음 만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검찰제도를 왜 만들었냐 하면 프랑스 혁명기에는 절대왕정 시대에 있어서의 수사·재판 절차를 아직 극복을 하지 못해 가지고 법원에 있는 판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자기가 기소한 것을 재판도 하는, 소위 이걸 규문절차라고 법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사·기소·재판이 법원이라는 하나의 기관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인권 보장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나폴레옹

시대에 이걸 분리해 가지고 수사를 담당하는 부분과 기소를 담당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재판을 담당하는 부분이 나눠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수사는 수사기관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소는 검찰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김남근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예,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때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됐었고 검찰이라는 제도는 역사적인 탄생 배경과 같이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분리돼서 기소를 담당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못해 왔거나 수사권을 남용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를 오히려 견제하고 법리에 맞게끔 인권을 보호하면서 기소권을,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담당하는 것들이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제도라는 것 자체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역사적 출발점이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검찰제도라는 걸 프랑스를 따라서 만들게 됐던 게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한 다음에 사건을 가져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범인을 잡거나 범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거나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능력이 있었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재판에서 어떤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경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과 같이 영국법에서도 검찰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한 걸 가지고 다시 기소할 건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검찰제도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지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도 검찰제도를 받아들일 때 수사와 기소는 원칙적으로 분리돼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충권 의원님께서 김남근 의원이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원래 저녁에 올라오게 돼 있었는데 좀 일찍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제도라는 것들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라마다의 역사가 다르니까 나라마다의 모습이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모습은 검찰이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법률 전문적인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돼야 되거나 빠르게 기소를 해서 판결을 받아 낼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경찰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같이 수사하고 거기서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지 경찰을 제껴 놓고, 수사기관을 제껴 놓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만큼은 세계의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검찰제도를 보게 되면 검사들이 원칙적으로는 수사인력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게 되면 경찰과 협력을 해서 합동수사본부 같은 걸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지 그런 직접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많은 수사인력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직접수사인력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수사기관도 그래서 점점 전문화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복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국의 국립범죄청, 범죄수사청 이런 거하고 가까운 것일 텐데요. 경찰청 외에 별도의 그런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있고 미국은 더 세분화 돼 가지고 마약 수사하는 데 따로 있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취업하고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이민수사국 같은 데가 따로 있고 굉장히 복수의 수사국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수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복수의 수사기관을 갖지만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걸로 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검찰도 보게 되면 그런 기소권, 수사해 온 것들에 대해서 기소 요구를 하는 것과 막상 기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가 안 된 경우에는 다시 수사기관에 돌려보내는 재수사 요구권만 갖고 있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이 프랑스하고 독일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혁명과 같은 그런 근대적인 혁명을 거쳤던 대륙국가들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근대적인, 절대왕정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 수평적인 관계지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원칙적으로 협력관계라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서로 협력 수사도 하는 것들이고 필요하면 가서 상의도 서로 하는 거고, 경찰이 검찰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법리적으로 이게 좀 막혀 있는데 검찰에 조언을 물어서 수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또 재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그냥 서로 기계적으로 사건기록 해 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재수사를 요구할 때는 수사를 했던 경찰을 불러서 같이 수사를 하면서 '이런 점이 좀 미진한 것 같으니까 좀 수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점들을 더 보완해서 수사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막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막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수사하지 말고 다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를 했고 또 그렇게 잘못 오해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들이 서로 협력관계가 아니라 무슨 지시하는 관계처럼 그렇게 지금 잘못 운영되어 온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잡자라는 것입니다.

재수사요구권 이런 것도 기계적으로 경찰과 검찰을 대립적인 관계에 놓고 서로 막 서류 오가면서 핑퐁하듯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그 기점마다, 기록을 넘겨올 때 필요하면 경찰이 와서 한번 수사기록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라 그러고 또다시 재수사,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때는 또 경찰을 불러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달라, 다시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관계가 기본적이고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너무 이념적으로, 대립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찰과 검찰을 대

립적인 관계로 보고 서로 얼굴도 안 봐야 되는 그런 관계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피곤해지는 게 되잖아요, 수사도 오래 끌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지금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적인 수사 체계를 가진 국가처럼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 협력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수사절차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절차 외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다 아직 논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구조개혁 하는 정부조직법 하나 했는데 여기에서 온갖 상상들을 동원하면서 뭔가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들을 막 내고 있습니다.

제가 당번이어서 새벽에도 와 봤는데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막 얘기하시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정부조직법 어디에 수사권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경찰에서 수사한 것의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건 있지만 그건 법안을 내신 의원님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담기신 거고 그런 거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금 정부조직법의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거대한 수사권 조정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서로 협력관계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수사권 관할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만나서 이것은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자, 이것은 수사가 이미 많이 진척됐으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 하자, 이것은 공수처가 우선 관할권이 있으니까 공수처가 하자 이런 것 얼마든지 만나서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은 수사 행정기관들인데? 그래서 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걸 굉장히 대립적이고 이념적으로 보시면서 또 무슨 거대한 수사권 조정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정부조직법을 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지금 정부조직법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막 상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시던데 또 그림까지 막 그려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뭔가 논의를 좀 체계적이고 충분히 하려고 그래도 서로의 선입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당면해 있는 그 법안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논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반성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있는 현실, 현안의 법들을 가지고 좀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요청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있고 그 독일의 수사지휘권 제도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아서 지금 EU 차원의 형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독일의 검찰의 수사지휘권 문제 때문에 EU 전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검찰에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그 수사지휘권 자체도 여러 논쟁 대상에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수사지휘권을 유럽에서는 수직적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그런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철학들이 확립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을 수사지시권으로 보는,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돼 있다,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검사라는 그 영어 용어를 프라시큐터(prosecutor)라고 얘

기하잖아요. 그렇지요? 프라시큐터라고 얘기하는데 프라시큐터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만들어 낸 것도 미국인데, 프라시큐터가 뭡니까? 우리로 번역하면 기소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기소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수사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도 기본적으로 검사의 역할들은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또 새벽에 좀 놀랐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이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이 중국의 사법제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갑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극우세력들이 근거 없이 중국에 대한 공격들을 하니까 아마 그런 중국 배후론 같은 음모론에 기대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검찰제도 운영이 중국 검찰에 가까울 수 있지요. 중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공소권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 발부권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한다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일부 경찰조직 같은 경우도 검찰이 갖고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대한 검찰조직을 갖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전형적으로 이런 비대한 권력을 남용했던 그런 검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비판하려고 하는, 자꾸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중국 검찰에 빗대어 가지고 뭘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가장, 중국의 비대한 검찰제도에 가장 가까웠던 것들은 우리 역사상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가장 가까웠다. 수사권에 기소권에 온갖 것들을 다 권한을 행사했고 심지어는 그냥 법을 만들어도 국회의 법을 다 무시하고 검찰청법 시행령 만들어서 자기들이 수사권을 창출해 내 가지고 수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러서 국민들로부터 엄청 불신을 받고 지금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수사·기소라는 것은 어차피 검찰제도의 시작부터 역사적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기본원칙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그 기본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라는 점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검찰도 원래부터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러면 아예 검찰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막 수사 개시를 하고 6000명, 7000명의 거대한 그런 수사인력들을 갖고 그랬느냐. 그러지는 않았지요. 결국 유신시대를 거치면서 또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특히 노태우 정권 때 검찰을 굉장히 비대하게 키우는, 그나마 박정희 정권하고 전두환 정권은 검찰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와 같은 정보기관 또 군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들은 낮았는데 군대가 직접 또 중앙정보부가 직접 정치나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사제도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검찰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검찰에 여러 가지 권한들을 주는, 그래서 대검찰청은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닌데도 대검찰청 밑에다가 그런 특수수사를 하는 기관들을 만들어서 직접 정치인들 수사를 하면서 그걸로 정치권들을 제압하려고도 했었고, 그게 부

패를 수사해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게 확대돼서 마약수사도 하고 점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원래 우리나라 검찰의 원형도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었고 이렇게 수사활동과 수사인력들이 비대하게 늘어났던 것들은 최근래에 와서 특수하게 벌어졌던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이거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90%는 아직도 경찰에서 수사해 온 것에 대해서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수사가 충분히 돼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하는 걸 하고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검찰의 본연의 역할들에 충실하게 하는 형사부에 배속되어 있는 검찰이 대부분 90%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검사는 불과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10%도 되지 않는 검사들이 다른 나라에 없는 6000명, 7000명의 거대한 수사인력들을 확보해 놓고 그걸 가지고 직접수사 개시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을 사실상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검찰을 폐지한다 그랬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그 수사인력 6000명, 7000명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어떻게 보면 보내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수사를 담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수사인력들이 가게 되겠지요. 검사들은, 뭐 검사들 중에서도 나는 보니까 체질이 인권보호를 위해서, 수사한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인권보호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전문성보다는 수사를 직접 해 보는 게 내 체질에 맞는다 그런 검사들은 또 수사관의 지위로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떻게 검찰청법 폐지안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하게 되면 한 1년 유예기간 동안에는 잠깐 직접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가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한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은 주로 검사는 없고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법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제범죄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수사기관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큰 개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듯이 비판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너무 이 개혁에 대해서 이념화되거나 너무 정쟁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크게 수사·기소 분리에 있어서의 조직구조 재편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조금은 실사구시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수사절차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정부도 TF를 만들겠다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 정치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와 관계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수사절차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찰청이라는 것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들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검사라는 용어하고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검찰청이라는 것은 그냥 검찰청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검사로 구성되는 수사하는 기관을 검찰청이다 이렇게 한 거여서 이건 법률상의 용어인 것이지 헌법상의 용어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검사라는 용어를 없애 버리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없애 버리고 그런 역할을 없애 버리고 그런다면 위헌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건 법률 정책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이라는 것은 검사로 구성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위헌일 게 없잖아요. 영장청구권도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들이 계속 행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소청의 장에 검찰총장을 보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나 지위를 없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 정책적인 것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이고요.

또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의 공백으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잘 머리를 맞대야 되겠지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런 필요한 수사들을 즉각즉각 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보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잘 만들고 인력들을 또 거기다가 인사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들도 만들고 또 필요하게 되면 검사들 같으면 가지 않을 테니까 일부 파견을 해 지원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공백은 최소화하거나 거의 없이 바로 조직 개편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맞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공소청 같은 기소 전담기관이 정치적 독립성이나 전문성, 효율성을 갖는지가 의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아서 원래 하던 기소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갑자기 검찰청은 정치적 독립을 했는데 공소청은 정치적 독립이 안 되고 검찰청은 기소의 전문성이 있었는데 공소청은 기소의 전문성이 없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는 또 많이 제기하시는 문제 중의 하나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이게 다 행안부가 밑에 있게 되면 행안부가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다 독립하도록 돼 있지요. 행안부로 직제상은 배치돼 있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경찰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던 것들이 윤석열 정부 아니었습니까? 행안부 안에 경찰국 이런 걸 둬서 행안부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려고 그랬던, 구체적인 사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경찰이 뭉개 버린 사건들 많이 있었지요.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는가 의아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

시 그런 경찰의 독립성 이런 걸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가 비대해진다 이것은 좀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독립성, 운영해 오는 그런 체계들을 잘못 지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잘못하면 핑퐁되는 것 아니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 보니까 이것 또 부족하네. 다시 사건기록 보따리 싸 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러면 또 뭘 보완하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른다고 또 수사 대충 해 가지고 다시 보내면 다시 또 보완수사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렇게 나타났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이재명 정부가 잘 극복하고 개선해야 되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타났던 것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수사지휘권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마치 검사가 수사기관을 지시하는 것처럼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향으로 검찰과 경찰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냥 기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절차로만 만나고, 같이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것처럼 이해한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 측면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수사절차 개혁을 할 때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분리하는 것들을 명확히 하고 둘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많이 하고 그런 걸 잘한 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는, 합동수사본부를 차리든 수사 기록을 가지고 가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사였다는 것들을 경찰관이 검사한테 잘 설명을 하면서, 어려운 수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잘 판단을 해 달라 이런 것들도 잘하는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도 좀 주고.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따리 싸 가지고 경찰로 보내고 기록으로만 이러이러한 거 보완수사하라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고 그 수사한 경찰 불러 가지고 이러이런 것들을 잘 수사를 해 봐라, 이거 압수수색 한 번 더 해 봐라, 이거 대질수사 해 봐라 이런 협의도 잘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면 이제 그런 협력 관계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굉장히 효율성 높은 그런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지시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수사·기소의 분리의 효과들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잘 얘기를 해 보자 이거지요.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자꾸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사·기소의 분리가 원칙적으로 잘 정착이 돼 있고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기소만 전담을 한다면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원래 기소를 전무하는 검사가 수사인력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수사를 방대하게 벌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기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들만 조사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완수사권이 운용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엄청 높아서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이재명 정

부에서는 그렇진 않겠지만 또 다른 정부에서는 그 보완수사권을 이용해서 사실상은 수사를 개시한 걸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다시 또 악용해서 수사 개시하는 걸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정착할 때까지는 보완수사권을 직접 주는 방식의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적어도 몇 년 후에 수사·기소가 잘 정착을 한 후에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부족한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들을 못 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너무 기계적인 사고다. 같이 만나서 경찰과 해 보니까 기소하려면 이런 정도의 증거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상의를 해 가지고 경찰이 더 보완수사를 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해 오도록 해서 보완수사가 일주일 만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처럼 갔다가 이제 하세월이 돼서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무슨 제도인 것처럼 정쟁을 벌이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문제도 실사구시적으로 보자. 언젠가는, 더 이상은 이렇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게 됐다. 수사·기소 분리가 정착을 해서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그때는 이제 수사인력도 못 갖고 있을 테니까요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 있고 그랬을 테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보완수사권 얘기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그런 협력적 관계로 보면, 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합동수사도 해 보고 또 불러서 이거 보완하라고 얘기도 하고.

기소할 때 '딱 보니까 이 증거가 결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수사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기소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법원에 가면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만 부랴부랴 확보를 해 가지고 검찰에 보내서 빨리 기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보완수사권 논쟁을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얼마든지 해 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다 과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늘, 그것도 정부조직법도 아니고 국회법 필리버스터를 하는 마당에 또 나오셔 가지고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완전히 삐걱거리는, 검찰과 경찰을 기계적으로 대립시켜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뭐가 안 돌아가는 그런 체계들을 막 상상해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부가 그런 식의 삐걱거리는 관계들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렇지요? 서로 협력하는 유연한 관계들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것은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의 개혁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해 놨는데 경찰이 굉장히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방대한 인력이 천차만별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수사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경력 한 10년, 20년 된 베테랑 형사들도 있고, 그런데 막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균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자의 수사관들에게 그냥 기계적으로 맡겨 놓고 각자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 수사도 분명히 나오지요.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실제로 검사들 얼굴 보기는 힘들고 주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거나 그러면 주로 경찰관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꽉 막혀 있다거나 유연성이 없다거나 너무 지연을 한다거나 뭘 어떻게 수사를 하는 건지 방향성도 잘 알 수가 없다거나 이런 불만들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경찰수사 체계 내에서의 개혁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의 예들을 보면 수사지도관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테랑 형사들을 놓고 베테랑 형사들이…… 주로 수사 지도가 많이 필요한 게 살인사건,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은 사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거개가 이렇게 복잡한 수사 지도가 필요한 것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경제사건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법리적으로도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런 쪽 경제범죄 수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해 온 베테랑 수사관들을 경제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지도관 같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임명해 놓고 그 수사관들이 3개월 내에도 수사 착수를 못 했다든가 6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그러면 수사지도관들이 개입해 가지고 수사들을 빨리 효율적으로 완성하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경찰 내에서 그런 수사 능력을 좀 높이도록 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검사보고 다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아서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 내부에 있어서의 수사 절차나 수사 능력이나 수사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과 검찰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논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어떤 법령으로 될 수도 있고 행정시스템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의 교류라든가 서로의 논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느닷없이 갑자기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 안 될 거다, 다 삐걱거릴 것이다, 다 문제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 가면서 비판하는 것들은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조직법에 없는 이런 내용까지도 막 가지고 비판하시던데 조금 차분하게……

자기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보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를 굉장히 이념적, 정쟁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은 냉철하게 수사를 제대로 하는 행정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또 그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정치권에서 좀 더 여론을 모아 가지고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

면서 가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정부조직법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재정경제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이번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국회 정무위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회의가 자주 열리기도 어렵고 이것에 대한 협력을 받아 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정부 초기에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 지금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첨단산업들을 육성하고 여러 경제정책을 펴 나가는 데 금융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금융정책을 어디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에서 해 가지고는 힘 있게 금융정책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 초기 단계에서 야당의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얻어 내기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유동적인 상태로 하는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루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따로 이걸 비대화됐다 비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부처만 떨어져 나와서 국무총리 산하로 가고 재정경제부는 재정·국제금융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조세 이런 것만 남아 있으니까 비대화된 게 아니라 기존보다는 좀 더 작아진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어서 이걸 지금의 정부조직법에다 대고 비판을 하는 것들은 너무 번지수를 잘못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국회법에 와서 필리버스터 하시냐라는 건 의문이 듭니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통과할 때 그때 필리버스터 충분히 하셨고 충분히 비판했고 그래서 처리가 됐는데 다 지나간 걸 가지고 다른 법에 와 가지고 또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법 붙잡고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가지고, 아무런 쟁점 없는 민생법안 붙잡고 정부조직법에 문제 있었다, 방송미디어통신법에 문제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버스터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에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모든 법에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것인데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의 너무 권한 남용, 필리버스터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인원을 제대로 구성을 못 해서 2명만 돼 버리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합의제가 되려면 과반수의 인원은 있어야 되는데 과반수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다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처분이 대부분 다 법원에 가서 무효,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처분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게 뻔히 있는데도 아무런 입법적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를 더 늘려서,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맞게 적어도 과반수의 인력들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분풀이식의 힘자랑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던데 이것은 오히려 법원에서 계속…… 삼권분립의 원칙인데 삼권분립이라는 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원이 계속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행정부나 입법부가 '뭐가 문제야? 계속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오기의 정치를 한 거잖아요. 이상한 방송통신위원장 한 분 갖다 놓고서는 그냥 오기로 끝까지 버티면서 행정을 마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오기의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이게 분풀이식의 힘자랑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오기의 정치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요? 사법부가 고치라 그러는데 그러면 고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법부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합의제 행정기관에 맞게 인원도 늘리고 구성도 다양화하자 이게 입법 취지여서 이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막아야 되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것도 너무 필리버스터를 남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는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서로 철학적이고 우리 에너지정책에 관한 중요한 함의들이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잘 논의할 필요도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을 했고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를 이념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에너지 타협 정책으로 해서 원전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재생에너지와 같은 빠르게 성장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타협 정책에 따라서 원전 사업들은 산업통상부에 계속 남기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하는 것들은 이게 또 한편으로는 다른 환경규제와, 석탄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정책적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이게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반대해야 될 그런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다.

또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한 번 합의를 해 주셨잖아요. 정부조직법이 문제가 있다고 합의를 깬 게 아니라 3특검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합의를 깨신 거잖아요. 그러면 3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한번 논쟁을 해 보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왜 정부조직법의 합의는 깨야 되느냐, 그래도 합의 볼 정도의 내용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의하셨던 건데.

그리고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마냥 5년 내내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 초기에 방향을 빨리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제때라는 어떤 시기가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도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다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계시는 거 아

니에요. 그렇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조직법을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합의했다가 왜 깨는지도 모르겠다, 3특검 반대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부조직법은 왜 반대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극렬하게 반대해야 될 문제인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은, 물론 유럽이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원전을 정리를 하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거기도 에너지 타협 정책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 우리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은 있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키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다시 또 발동이 되겠지만 유럽에서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급망 체인에서 RE100이라고 얘기하는, 재생에너지100이라고 얘기하는, 100%로 생산한 물건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거래의 조건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 때, 포항제철에서 철강을 만들 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 때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야만 거래조건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유럽에 있는 대기업들이 거래조건으로 하도록 규범화하겠다라는 것들이 유럽에 있어서의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국은 법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구글, 애플 이런 주요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삼성이 반도체를 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조건으로 얘기를 하면서 해 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100%로 하지 않으면 한 30년대쯤 가게 되면 거래조건을 못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고, 다른 쪽은 그것을 급속하게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데 윤석열 정부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들을 잘 이해를 못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이념적으로 받아들여서 '무슨 재생에너지야'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있는 분들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이 RE100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 세계에 있는 11개 공장을 실사를 해 봤다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세 군데 있었대요. 다 해외에 있고 국내에는 없대. 그러면 만일 진짜 유럽이 또 미국의 어떤 계약법에 의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물건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맞출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해외로 물건을 다, 생산기지를 옮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산 물량 옮겨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일자리 공백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기가 오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부터 계속 RE100, RE100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RE100이 뭔지 모른다고 방송에서 그러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많이 야단을 쳤대요. 왜 RE100 얘기 안 해 줘 가지고 자기 망신 시켰냐고 그랬는데,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자원부의 공식 명칭이 뭐냐 하면 리백이에요, 리백. 알이(RE)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리니까 리백이어서 리백 리백 가르쳐 줬는데 그 리백과 RE100이 같은 얘기인지 몰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가르쳐 줬냐고 그랬다는데,

내용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용어를 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RE하고 리(RE)하고 같은 건데,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때부터도 이미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제조업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RE100은 달성해야 될 목표고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산업들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진짜 지혜를 잘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들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데도 많고 풍력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될 수 있는 곳에 모으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새만금이든 신안이든 울산이든 이런 해안가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에 자동차 부품 공장 이런 것을 다 입주시키는……

왜냐하면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에서는 유럽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이런 데에만 RE100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업체, 협력업체도 RE100을……

그래서 부품업체,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현대자동차와 같이 많은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또 삼성전자와 같이 많은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만일 못 확보할 경우에는 결국 해외로 가는, 그런 게 좀 더 유리한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RE100,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총력전을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이념적인 문제로 보시면 안 된다. 2030년대 가면 곧 닥칠 문제고 적어도 한 10년은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아무튼 이것을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실용적으로 해서 원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원전으로 해 보고, 원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빠르게 건설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할 것들은 육성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육성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셨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와 합쳐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시켜 나가는 환경규제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조직법에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해야 될, 아주 극렬하게 반대해야 될 그런 내용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도 필리버스터의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국회법에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아마 이 점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인설관이다, 누구 사람을 정해 놓고 차관급 자리 하나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그렇게 사람 정해 놓고 사람한테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법을 만들고 그러실 분도 아닐 것 같고 또 그것을 관철시킬 만큼 그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상상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법원도 법원기록보존소라는 것을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부도 국가기록원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런 중요한 어떤 법원 기록이나 행정 기록들에 대해서는 영구 보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는 중요한, 영구 보존해야 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존하는 기관들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도 국회기록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은 그 자체로 보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국회도서관 안에 기록과 관련된 부처가 있지만 그것은 영구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들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비하고 영구 보존의 체계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데는 아닌 것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국회기록원을 법원기록보존소, 행정부의 국가기록원처럼 따로 만드는 것들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도 어떤 의혹이 연결이 되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인설관이라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시는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왜 국회가 다 하느냐, 국회에서만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국회기록원법에 의하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인 기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증과 협조를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영구 보존할 것들을 국회기록원에서 정리를 해서 보존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아마 이것은 이 법에 따른 국회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국회의원들의 기록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영구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국회활동이나 국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정활동들에 맞추어서 기록이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인 규칙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갈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게 쓸데없는 기록까지를 방대하게 모아서 보존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당에 대해서도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회활동 중에도 정당과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있지요. 교섭단체도 어쨌든 정당 중에서 정하는 것이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양당에서 의원총회 같은 것들도 열고 이런 것들은 정당활동이지만 또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당활동 중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들을 국회와 관련해 가지고 영구 기록 보존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국회규칙이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법원,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기록 보존을 하는 시스템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오늘은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인데 왜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법의 내용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부처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바뀌고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가 어디에 소속되느냐를 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기획부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 이름들을 반영을 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좀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강력히 막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저보다 앞서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셨던 유상범 의원님이나 강선영 의원님이나 박충권 의원님의 내용에도 보게 되면 국회법을 비판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국회기록원법, 국회기록원에 대해서는 또 일부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정부조직법을 비판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셔야 되고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조직법 통과할 때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하셨고,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 한 후에 이미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이미 처리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들은 너무 필리버스터를 좀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느 법이나 다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면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아주 원격의 인과관계—리모트 코제이션(remote causation)—까지를 전부 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국회법에 반대했는데 그 국회법에서 만들어진, 명칭이 변경된 상임위원회에서 법을 처리한 것도 그러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확장이 돼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비쟁점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심 끝에 국회의장님께서 본회의에 상정을 못 했는데 사실 그 법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게 꼭 통과되기를 염원해 왔던 많은 서민들, 중산층, 경제적 약자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원래 이번 국회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까 봐 상정을 못 했다, 이런 것은 참 설명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필리버스터의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터라는 얘기가 들어갔듯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해적질 이런 용어였는데 미국에서 1851년에 이런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들이 나올 때 스페인어로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라고 얘기하는 해적질 이런 표현을 썼던 것들은 그때 의회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했던 행위들이 아마 그렇게 폭력적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미국 남부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폭력적인 반대운동을 벌였던 필리버스터라는 단체들, 총칭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썼던 것 보면 초

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막아야 되는 행위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라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에서도 운영례를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쟁점이 되고 있는, 토론 중인 그 해당 법안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돼 있지요.

국회법이면 국회법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이미 다 통과해 버린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다,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게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24시간을 기다렸다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서 5분의 3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또 모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정활동, 지역에서의 활동들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다 국회로 또 모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선과 또 많은 업무들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게 뭐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필리버스터가 되는 경우라면 프랑스처럼 자동으로 표결에 넘기는 이런 방식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필리버스터가 소수의 의견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이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써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남용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고 그런 장치를 법으로 만들기 전에 여야 지도부께서 또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남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제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또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앞서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많이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인 지적이 국회 운영을 굉장히 형식적인 민주절차로 하고 있다, 죄다 표결로 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 절차는 합의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시고요. 국회 운영이라는 것들은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기본으로 하면서 충분히 숙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되면 합의를 하고. 그렇지만 충분한 어떤 쟁점이 정리가 되고 논의를 했는데도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할 때는 또 보충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도 하고 이런 게 국회의 운영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합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민주주의 원리하고는 좀 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토론하고 어느 정도 숙의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리를 못 하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많이 논의됐는데 왜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냐, 누가 발목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많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숙

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해야 될 시점까지는 못 했다 그러면 표결도 해야 된다.

또 특히 정부조직과 같이 정권 초기에, 정부 초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제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들은 토론이 부족하더라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혜안을 가지시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희 여당 의원님들은 '이것 꼭, 어느 정도 논의가 됐으니까 이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겠다' 이러시는 게 많아서 저희 여당 의원님들도 우원식 국회의장님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이 이런 국회 운영의 원리, 충분히 숙의민주주의를 존중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됐는데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것도 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거의 합의된 비쟁점의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저는 국회가 그런 민주주의 원리를 충실히 고민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비판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비판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특히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두기로 하고 공소청을 법무부에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서 주로 비판적인 논의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들은 검찰은 주로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들은 앞서 토론해 주신 유상범 의원님 말씀도 보면, 유상범 의원님도 법률전문가이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기소 전문기관으로 나온 것이지 수사까지를 직접 하는 그런 기관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요.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이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프랑스의 예를 보더라도 처음에 프랑스혁명 시기에는 제대로 된 어떤 제도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왕정 시대와 비슷하게 법원에 있는 판사가 수사도 하고 자기가 또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는 소위 말하는 규문 절차라고 그러지요. 수사·기소·재판이 분리돼 있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했는데 그 폐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폴레옹 시대에 와서는 이 셋을 분리해서 수사는 수사판사를 두되 수사판사가 수사기관에 다 위임을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 기소는 기소를 전담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판사들은 재판에 전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이렇게 검찰이라는 제도가 새로 탄생했던 역사적 배경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출범을 했지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수사는 수사기관이 수사해 온 것들이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다든

가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수사를 하도록 한다든가 또 인권침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인권침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문이 많이 횡행하던 시대였고 그런 것을 견제하는 역할도 검찰이 하던 거였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지요. 우리나라 검찰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 수사해 온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뭐가 좀 부족한데, 너무 무리한 수사 하는 것 아니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자신들이 배운 법리적·법률적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데 발휘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수사하면서 때로는 인권침해 시비에 많이 휘말리게 되고 때로는 정치적 의도로써 수사를 한다라는 시비에 많이 휘말리게 되고 또 스스로가 정치권력처럼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수사하는 기관들이 그런 비난을 받고, 수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수사라는 게 강제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비에 휘말리기가 쉬운데 그런 것을 좀 법률전문가로서, 인권전문가로서 견제해 내는 것들이 검찰의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어야 될 인권의 전문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다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모양새가 된 게 아닌가, 역사적 배경하고는 정반대로 최근에는 운영돼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프랑스에서 처음 검찰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처럼.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영국에서는 예전에 검찰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그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재판을 했는데 법률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공소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판사들한테 많이 지적도 받고 또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의 반성 속에서 법률전문가가 수사한 것들을 가지고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소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도 법률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런 반성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대륙법계에 있었던 검찰이라는 제도를 영국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어서 영국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추를 하는 기관으로 발달을 해 왔다.

독일이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우리는 좀 잘못 이해를 해서 마치 지시를 하고 상하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운영돼 온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검찰시보나 이런 걸 나갔을 때 보게 되면 수시로 경찰 불러들여 가지고 야단도 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잘못 이해한 건데, 수사지휘권이 수사지시권은 아닙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것, 절대왕정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그런 것을 겪었던 유럽의 문화에 있어서는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이렇게 권위적으로 하고 고압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거지요. 다 수평적인 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원칙적으로는 다 협력 관계다 이거지요. 수사지휘라는 게 결국은 경찰의 수사를 도와주는, 협력해 주는 그런 관계의 관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경찰 같은 경우도 나중에 결국 최종적인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한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검찰과 협력하고 그런 관계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수직의, 상하의 관계로 보는 것들

은 좀 잘못 운영이 돼 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사인력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필요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있어도 검찰이 직접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이 돼서 수사 개시를 하는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들은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자, 역사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서 하자라는 그런 것이고요.

(「미국의 보완수사 이런 거 같이 얘기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이따가 보완수사권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서부터 그러면 검찰이 많은 수사를 했었냐? 그러지 않았지요. 우리도 처음에 출발은 분명히 기소 전문기관으로 했는데 유신시대 때나 전두환 정권 때는 군부가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군대라든가 아니면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통치를 많이 했었는데 노태우 정권 때쯤 되니까 군대나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통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이용하는 게 많이 늘어났는데 대검에다가 중수부—중앙수사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고위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수사를 직접 검찰이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마약수사 한다고 그러면서 마약부도 만들고 조직범죄 한다고 그러면서 강력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하는 수사가 많이 늘어났던 것이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검찰이 많은 수사들을 직접 하는 그런 체계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검찰이 6000명에서 7000명씩이나 되는 수사 인력들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자라는 것들이 지금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 한 육칠천 명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나 부패수사나 경제범죄 수사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으로서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폐지하지만 그 인력들은 대거 그쪽으로 이동해 가고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수사기록 이런 것들이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해 가서 거기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검사들의 역할들은 본연의 역할인 기소, 공소청으로 남겠다, 공소청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우리나라 검사 중에 90%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갖고 온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수사 결과들을 검토를 하면서 기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기소가 어려운 것들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90%의 검사들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공소청이라는 곳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거냐는 의문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데 그건 조직구조 개편에 관한 얘기보다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쉬운 거잖아요. 수사가 종결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다, 압수수색을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다, 때로는 대질신문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증거를 보완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둔다라는 건 그렇게 큰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보완수사권을 주면 또 저걸 악용을 해 가지고 수사를 다시 개시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는 그걸 잘 통제하겠지만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보였던 저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개시권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참 부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검찰청법의 시행령을 가지고 법에서 금지해 놓은 그런 수사들도 부활시켜서 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였던 게 엊그제 일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수사·기소가 분리돼서 검찰은 주로 기소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하는 업무에서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정책이 된다면 그때 보완수사권 논의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 한다는 식의 것도 굉장히 잘못된 논의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검찰과 경찰의 기본적인 관계는 협력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가 끝났으면 검사가 좀 보자고 면담을 해서 수사관한테 이 수사 어떻게 하는 거냐도 하고, 거꾸로 또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거 수사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사를 찾아가서 수사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사였습니다, 설명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빨리 검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기소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또 마찬가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자체적인 보완수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한 경찰을 만나서 지금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다, 이것을 더 수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 다시 기록을 가지고 가 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딱 그것에 맞춰서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검찰과 경찰을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문서로 그냥 끄적끄적 써 가지고 보완수사하라 그랬더니 수사기록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또 다시 계속 핑퐁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계적인 대립관계로 보는, 그래서 굉장히 삐걱거리는 관계로 보는 그런 관점 아니겠어요?

세계 어느 나라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서로 삐걱거리는 관계로 하겠어요. 서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되잖아요. 내가 수사한 게 빨리 기소되고 빨리 정리가 되려면 검사한테 가서 하나라도 잘 설명하려 그러고 검사가 또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지가 않아 가지고 좀 증거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또 보완수사 해 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대부분 경찰들 제가 붙잡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지요. 빨리하지 계속 서로 핑퐁하겠다 그러는 경찰이 누가 있어요. 검사들 중에도 요즘 심기가 안 좋아 가지고 피의자 얼굴도 안 보고 경찰하고 한 번 전화도 안 해 보고 기소하겠다는 검사들도 있지만 그게 올바른 검사들의 상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했으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검사하고 합동수사하고 서로 협력 많이 하고 그런 경찰 수사관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검사도 자꾸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필요하면 불러서 경찰하고 같이 숙의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수사 내용들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기소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수사와 기소 관계가 서로 분리는 돼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그런 유연한 협력관계로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인 이의신청해서 오고 그래서 다시 재수사할 때도 다시 경찰과 검찰이 만나서 우리가 다시 이의신청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혐의가 좀 있는데 이런 증거를 좀 더 보강해 오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경찰과 협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해 가지고 수사를 보완해서 오면 또 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수사를 해 봤더니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검사도 달리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지 그렇게 수사·기소라는 걸 기계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경찰과 검찰은 서로 떨어져서 얼굴도 보면 안 되고 전화도 하면 안 되고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로 대립적인 관계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없으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 중에서……」 하는 의원 있음)

수사와 기소는 모든 나라가 다 분리돼 있고 그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서로 대립해 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전화도 안 하고 문서로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나라는 없지요. 그렇지요?

(「분리된 나라 중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권……」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보완수사권 행사하는 나라도 많이 있고.

저는 우리도 몇 년 지나면 보완수사권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게 논의하고 또 뭐든 도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논의들은 보완수사권을 수사개시권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악용해 왔던 검사들이 사실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악용이 안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점에서는 직접 수사하는 게 검찰로부터 좀 더 멀어지는, 어느 정도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정착을 했다는 시점이 올 것 아닙니까? 저는 이삼 년 있으면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 가서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협력관계로 보완수사를, 보완수사권이라는 권리, 제도로써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서로 협력을 통해서 보완수사라는 결론을 얻어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얼마든지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협력관계로 해결해 낼 수 있고 그런 것을 장려해야 된다.

필요하면 아예 처음서부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어렵게 경찰이 혼자 붙잡고 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검찰하고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합동수사도 해 보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검찰하고 상의하면서 수사도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문제는 경찰 개혁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접하는 것들은 검사들이 아니고 경찰들이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3개월은 커녕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 수사 개시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사건도 사실은 상당히 있고 특히 경제 범죄, 사기죄라든가 횡령·배임죄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그런 사건들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경찰이 엄청 많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그리고 다 천차만별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도죄나 살인죄나 이런 것들은 범인을 잡는 게 어렵지 사건 자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시비는 안 생기는데 경제범죄라는 건 범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걸 어떤 범죄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해야 될지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되신 베테랑들도 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력도 짧고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경제범죄를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수사관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성폭력 사건 이런 건 또 굉장히 예민하고 인권적인 절차나 수사를 받는 피해자의 인권, 심리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아예 개시도 못 하는 수사관들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수사지도관 제도 이런 것들을 둔단 말이에요. 베테랑 형사 같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제대로 수사도 착수 못 한다, 6개월 이내에 수사를 못 끝낸다 그러면 그런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해 봐라.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해 봐라. 어느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같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상의해 주고 지도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수사기관 내에 만들어서 수사기관 내에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가 되도록 하는—그게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는 거니까—그런 상태 속에서 수사가 완결돼 가지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면 좀 더 서로……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핑퐁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 그러는데 그런 예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김예지 변호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인권변호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에는 굉장히 찬성하시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신 분인데, 그렇게 되신 것 중의 하나가 특히 여성 인권 사건, 장애인 인권 사건 수사를 보니까 경찰이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데 검사가 이걸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해 가지고 진척도 못 시키더라, 이런 전문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못 하는데 이걸 해결하지도 못 하는 걸 보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타당한 내용이 있지요, 김예지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경찰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수사에 전문적인 수사지도관들을 두고 그분들이 개별 경찰서 내에서 아니면 서울시경 단위에서 그런 수사 지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신속하면서도 피해

자의 인권들을 잘 보호하면서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수사와 기소를 반대하는 논리로 하는 건 저는 김예지 변호사님의 주장에 동의는 하지 않는데, 약간 비약이 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의 어떤 큰 원칙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도 수사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어떤 큰 구조개혁의 문제에 대한 것이기보다 수사 절차에서 운영의 문제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얘기해 보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반대를 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검사하고 경찰은 다 기계적으로 대립돼 있고 서로 협력도 하지 않고 계속 삐걱거리고 서로 전화도 안 하고 보따리 싸서 한 장에다 이렇게 수사하라고 보완수사 요구해서 보내고 또 그걸 받은 수사기관은 '뭘 보완할 게 있어' 그래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보내고 몇 년 동안 핑퐁할 거다 이런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상상의 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게 안 나타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협력 행정 관계로 해결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 또 검찰 내에서 행정적인 개혁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이 새벽에 비판하신 것 보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거대한 권력을 새로 만들고 경찰이 이의한 사건을 갖다가 수사조정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수사를 하냐 이런 비판 하시는데 정부조직법에 그런 내용도 없어요. 물론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정부조직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정부조직법에 없는 내용까지 갖다가 놓고 비판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실사구시적으로 있는 걸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각자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걸 갖고 비판하는 식으로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상당히 생산적이지 않고 소모적이고 각각의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그렇게 정쟁적 방식이 아니라 조금 실사구시적이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논의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을 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재경부 문제예요. 재정경제부가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 정책 부분과 감독 부분을 분리해서 정책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보내자, 이건 안 하기로 한 거지요. 그렇게 된 것은 어쨌든 정부조직법 이후에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금융 관련 법안들은 정무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정무위원장님이 국민의힘 의원이고 협력을 구하기 어렵고 아마 회의도 열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걸 패스트트랙으로 했을 경우에 6~8개월이 걸리는데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에 지금 국정운영에 있어서 AI, 바이오, 반도체 이런 첨단전략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때 대대적인 재정 투자나 금융정책,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니 첨단산업펀드니 이런 금융정책을 통해서도 민간의 자금들을 대거 모아 가지고 신산업 육성정책을 한다라든가 또 지금은 거의 총성 없는 기술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데 있어서는 각국마다 자기 국내 산

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조직 정비라든가 또 조직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정부 관료들이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법안 처리를 통해서 조직 개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이런 논의들은 일단 중단을 하기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정경제부는 비대해진 게 아니라 국내 금융도 안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획예산 부분들은 떨어져 나가서 국무총리 산하에 가서 오히려 상당히 축소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그런 내용인데 자꾸 이걸 재정경제부가 비대화된다 그러면 통과된 법안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하지 말고,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한 대로 재정경제부가 비대화되는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판의 내용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그다음 반대하신 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이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분풀이식 힘자랑이다' 이렇게 또 비판, 문언에 그렇게 돼 있네요, 국민의힘에서 논의한 문건을 보니까. 그런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합의제라는 건 법리적으로 따져 봐도 딱 과반수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의결을 하고 처분을 하려면? 그런데 이게 보니까 5명으로만 돼 있어서 조금만 잘못되면 아예 과반수도 구성이 안 돼서, 그리고 2명이서 처분을 한 거잖아요, 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우리 법원이 그 2명이서 한 처분에 대해서 죄다 무효라고 위법하다고 판결했단 말이에요. 1건도 없이 거의 다 지금 법원에서 빠꾸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분립도 해야 되지만 또 서로 존중도 해야 되잖아요. 사법부도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한 것들은 존중을 해서 법안도 가능하면 합헌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지 않고 위법한 것에 대해서만 취소를 하고, 행정소송의 원리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헌법소원의 원리가 이런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법부에서 이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죄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입법부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명이 아니라 7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과반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도 5명 너무 좁게 해 버리니까 다양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니까 구성하는 방식을 다양성 있게 해 가지고 과반수가 계속 유지되게 하자, 이게 법안의 주요 골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행정소송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금 방통위원회가 거의 전패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한 모든 행정처분이 지금 다 거의 행정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는데 그런 걸 존중해서 하자는 거니까 이걸 존중해서 법을 고치고 그런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걸 안 하면 오기의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 사법부가 문제야' 이런 인식의 것이 되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입법부를 조롱하겠어요. 사법부에서는 지금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만 오기로 그냥 계속 제대로 된 방통위를 구성도 하지 않고 간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자라는 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다.

그래서 분풀이식 힘자랑이 아니라 이런 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기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 때문에 이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극렬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이것도 저는 필리버스터의 남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용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맞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물 좀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기후에너지부도 또 반대를 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중에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전 문제하고 재생에너지 문제는 좀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타협이 필요한 문제다. 유럽도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전력 비용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 이런 게 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타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지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건 한다 이거잖아요. 안 한다, 중단한다, 원전을 폐쇄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은 한다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유럽에서 공급망실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EU 차원에서 만든 건데 이미 그 전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들은 같은 취지의 법들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대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이런 데하고 거래할 때 그 제품이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됐다라는 걸 증명하라고 그러고 그런 제품만 사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유럽에서 제재를 받도록 이런 법이 지금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래가 끊길 우려가 있는데.

그리고 유럽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법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계약의 조건으로, 그래서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이미 RE100에 관한 계약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구글, 애플, 이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 그 반도체가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언제까지 달성할 거냐, 예를 들면 그쪽은 2030년까지 해 오라이고 우리는 2035년까지 할 수 있다이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어쨌든 2030년대에 가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지지난 대선에서 RE100이 큰 이슈가 됐지요. 이재명 후보가 RE100을 들고 나오고 이걸 이제 꼭 해야 된다, 세계적인 변화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에너지라는 게 한 10년은 돼야 그런 걸 육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RE100이 뭐야?’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RE100도 안 가르쳐 줬다고 엄청 호통을 치고 그랬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자원부

에서의 공식 용어의 명칭은 리백, R이니까 발음이 리잖아요. 그러니까 리백이었는데, 그래서 리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 리백과 RE100을 같은 건 줄로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왜 날 RE100을 안 가르쳐 줬냐?' 그랬다는 건데 그만큼 이해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빨리 쫓아가지 못하면, 러우전쟁 이후에 다시 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2030년대에 가면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하라 이런 걸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실사를 해 봤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11개 공장에서 우리가 RE100을 맞출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3개 공장에서 할 수 있는데 다 한국은 아니고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2030년대 중반 넘어가 가지고 '자동차도 다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해 오라. 그렇게 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 현대자동차는 물량을 다 해외로 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것 아니에요, 국내에서. 이런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그때 가서 재생에너지를 갑자기 확 100%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가야 되고.

더더욱이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국민의힘의 내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이미 중국에 뒤졌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던데 더더욱이 우리가 중국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려고 그러게 되면 더 비상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RE100 클러스터니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해안가 이런 데다가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에 자동차나 전자, 반도체,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재생에너지를 써야만 해외 다국적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공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비상한 방법까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하게 또는 무심하게 다 보내서 시간을 3년이나 허비하는 바람에 그 3년 사이에 중국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고 이미 다른 나라들도 엄청나게 치고 나갔는데 한국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돼 있고 더욱더 뒤처진 상태가 돼 있어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한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 남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은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과 일정 정도 또 맞춰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와 합쳐 가지고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 이랬던 것 아닙니까.

이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강렬하게 막아야 되는 내용이냐? 정책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막아야 될 만큼의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필리버스터의 남용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필리버스터라는 게 쟁점이 명확하고 이건 꼭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꼭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명확한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라는 게,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하라는 게 필리버스터지 아무거나 되고 다 필리버스터를 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힘든 것의 문제, 국회의원들이 힘든 것의 문제가 아니라 힘든 거야 다 같이 힘든 거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회가 필리버스터라는 걸 너무 남용해서 해야 될 것들을 제때 하지 않고 제때

입법도 하지 않고 제때 정책을 하지 않고 자꾸 싸우기만 한다 이런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내용 때문에 꼭 필요한 필리버스터를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웠다,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 마음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호응도 못 받고 있고 그것도 너무 남발을 하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전략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 않은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 쟁점도 없는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이렇게 일요일까지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략적으로 진짜 국민의힘이 생각하기에는 헌법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에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도 한번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국가기록원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또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의식은 이제 이런 거지요. 지금 법원도 법원기록보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도 국가기록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여러 기록이 남았을 때 영구 보존해야 되는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는 영구 기록 보존에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또 처리를 해 가지고 보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국회가 기록을 남겨 줘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12·3 내란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진짜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어쨌든 계엄이라는 것을 국회의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해제 요구권 행사로 막아 낸 것도 굉장히 드문 거고 이런 건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도 그렇고 그때 표결이나 또 나중에 이거와 관련된, 국회와 관련된 재판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남겨야 될 수도 있고 또 이때 각각의 활동을 하셨던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도 남겨야 될 수도 있고 각 정당이 어떻게 했는지도,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치열한 논쟁이 그냥 지나가고 다 잊어 먹어야 될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고 헌법 수호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논쟁일 수 있어요.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을 때 그때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회로 어렵게 들어와서 표결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누가 남깁니까? 없잖아요, 지금. 국회도서관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데가 있지만 그건 주로 기록을 관리하고 편철하는 이런 데지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록원을 만들자라는 게 그렇게 반대할 내용인가,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될 내용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해서 이것도 좀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를 한번 좀 여기서 들어 봤어요. 제가 마침 11시부터 2시까지 당번이어 가지고 유상범 의원님 것도 들어 봤고 제가 또 5시부터 8시까

지 또 당번이어 가지고 두 번째 강선영 의원님 얘기도 좀 들어 보고 또 이거 준비하느라고 와서 박충권 의원님 얘기도 좀 들어 보고 그랬더니……

첫 번째 또 얘기하시는 게 위인설관이라고 그래요. 누가 위인설관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마 그러면 이게 논리상으로 우원식 의장님이 미리 누구를 집어 두고 그 사람한테 차관 자리를 주기 위해서 했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게 또? 제가 아는 우원식 의장님의 인품이 그런 인물은 아니신 것 같고. 물어봤어요. 아니시래요.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위인설관을 위해서 했다라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주장을,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지 무슨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활동만 하냐, 왜 국회의원들의 활동들을 다 보관하냐 그러는데 당연히 국회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활동들의 기록들을 보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 법이 만들어지면 국회규칙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의 기록 중에 어떤 걸 한다이고, 국회의원들의 활동 중의 많은 부분들이 국회에서의 활동 아닙니까? 본회의도 있고 상임위 활동도 있고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법들이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이사회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들인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기업들이 상당히 성숙한 시기에 한번 대지배구조를 변화하기 위한……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걸 이제 사베인스-옥슬리법이라고 그러는데 사베인스라는 민주당 의원과 옥슬리라는 공화당 의원이 여야 대타협으로 그때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혁해 가지고 기업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겪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신뢰를 받고 투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은 다 믿을 수 없다고 다 떨쳐 나가 가지고 딴 나라 가서 우리 국민도 투자하고 외국 투자자들도 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시도해 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록에 남아야 될 수 있지요. 어떤 주장들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위원회라는 그런 활동을 했고 그런 걸 또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공청회를 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다 남아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인 거니까 그런 걸 법에다 담는 것보다는 그건 국회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관할 것인지를 다 만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국회의원들의 것들을 다 찾아서 한다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상상을 해 가면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비판점 중의 하나가 왜 정당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냐 그러는데 정당 활동이 또 국회하고 밀접한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본회의 하기 전에 중요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 어떤 논쟁들이 있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보관할 필요가 있으면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이나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하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당정 협의를 어떻게 했다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 입법을 하는 프로세스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위 위원님들도 국토교통부하고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공급이 반 토막이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당분간 주택공급이 쉽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신축인데 신축 아파트는 구경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막 6억, 7억씩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에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에서의 공급을 빨리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법안을 처리하고 그게 효과를 봐 가지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들, 주택공급이 절벽을 맞은 그 몇 년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냈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당 활동들도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정당 내부에서 비밀스러운 회의 한 것들을 갖다가 무슨 사찰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 아니냐 이런 건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또 국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방식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해 주면 그걸 수집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그 제출을 할 때 '이 기록물들은 어떤 취지에 관한 거고 어떤 용도로 보관해 주십시오. 어떤 용도로 남겨 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할 텐데, 그러면 없는 걸 국회에서 가 가지고 그냥 강제 처분을 해 가지고 압수수색해서 갖고 와서 그걸 보존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들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게 되면 이참에 국회가 제대로 진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데 이때 법원과 행정부에서는 오래전에 했던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도 기록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될 그런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국회법 표결을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법안이 추진될 수도 있을 텐데 법안이 추진될 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때는 다시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국민의힘도 역사적으로 남겨야 될 그런 것들이 좀 많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겠다, 국회에서는 제때 필요한 어떤 법안이나 정책, 예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밖에 나가서 하시겠다, 지금은 주로 이렇게 기조를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정당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도 비상 시기에는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만 그래도 그런 활동의 전체적인 틀의 범위들은 헌법의 질서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겠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것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런 세력과 손잡고 하겠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결합하고 있는 세력 중에서는 서부지원 법원을 막, 그 법원이 어떤 재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을 가지고 법원을 공격해 가지고 법원을 파괴한 그런 것을 선동하거나 주도한 세력 분들도 계시고 또 헌법재판소를 막 재판관들의 이름을 걸어 놓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헌법재판에 대해서 공격하고, 다른 유럽 국가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것은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그래서 헌법수호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게 되면 헌법상에 있어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그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헌정당심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세력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뭘 해 보시겠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해를 가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비판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도 헌법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그런 극우세력과는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원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오히려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라는 게 더더욱이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게 보수 정치의 가장 기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수 정치의 가장 기본이념인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그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그런 세력하고 손을 잡고 그런 세력에 휘둘려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정치 자체가 더욱더 위험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장외투쟁을 나가고 이런 것들은 또 그 정당의 판단이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지만 헌법을 파괴하려는 그런 세력들과 손을 잡고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들을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어떤 비판 불만 이런 것들을 국회법에다 얹어 가지고 같이 필리버스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명분이나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버스터라는 이름, 버스터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해적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폭력적인 반항 이런 것들의 어감을 갖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상당히 방해하는 그런 폭력적인 난동 이런 개념에서 아마 이름이 붙여졌었고 그 뒤에는 폭력적으로 의사방해를 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의사방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의 길은 열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수용된 것이고 제도적으로 수

용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라 그런 것이었다는 거지요, 역사상으로 보면.

또 그리고 정치 선진국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로 토론할 때는 꼭 해당 쟁점, 그 해당 법안과 관련된 것 밀접한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나와 가지고 딴 얘기 갖고 필리버스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그냥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걸 남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 그 다음에 보충성이라는 원칙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녹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가 남발되고 남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한번 필리버스터는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국회법의 필리버스터는 분명히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고 또 주로 필리버스터의 내용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돼서 이제 곧 구조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의 내용을 많이 보니까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그런 구조개혁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사절차 운영에 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또 상의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머릿속의 상상 속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 놨더니 이게 막 기계적으로 대립해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대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상을 그려 놓고 막 비판을 하시는데, 세상에 그런 행정조직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수사기관과 검찰의 관계를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없고, 일부 검사들이 반발해서 그런 경직된 운영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결과적으로는 검사들도 이것 수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지혜들을 발휘해 줄 것이다. 그래서 자주 수사기관들하고 보고 협의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수사도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고 증거 수집도 서로 협력해서 하고 이런 모습대로 갈 거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정부는 틀림없이 법무부나 행안부나 이런 행정개혁들을 이끌어 가시는 장관님들이나 청와대에 있어서의 담당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법률가 출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만 해도 한 25년 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왔는데 이런 별의별 사건들을 다 다뤄 봤고 검찰과 경찰에서의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 다 봤었고, 어떻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경험들을 잘 발휘하면서 세부적인 수사절차 제도나 운영, 행정개혁, 수사절차를 위한 행정개혁 이

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정경제부나 방송미디어통신 문제나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왜 이런 개혁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시는 내용이어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정부의 장관님들 또 행정부처에서 잘 수용을 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분 더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종욱 의원님이 지금 필리버스터하러 오신 것이지요? 저 혼자 끝까지 가면 안 되고 한 분 더 하셔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끝까지 가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종욱 의원님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제 내용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국회법 자체의 필리버스터의 쟁점보다 정부조직법 관련된 얘기들의 것들이 있었고 아마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 속에서 쌓인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얹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게 저는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내일도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막아야 되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들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는 법이 다 시행의 단계로 갈 텐데 정부조직법 같은 것 시행이 될 때는, 또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나마의 장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여러 분들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어떤 주장이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하는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도 정부에 잘 전달을 하고 그중에서 또 잘 수용을 해서, 이미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정부에서 개혁안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잘 참조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같이 힘을 잘 맞대고 또 지혜를 잘 맞대고 잘 소통하면서, 이런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무슨 문제의식인지를 저희들이 또 잘 수용해 낼 테니까 잘 소통하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종욱)

(16시06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이종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출신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3일째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보다 소상히 알려 드리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체제 붕괴를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정 발목 잡기다라고 하지만 우리 나경원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의 필리버스터 최종 목적은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대해 저희들이 저항하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늦추자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쟁점 비쟁점 법안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하는 조금 무례하지만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에 대한 저희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고, 특히 기재부 해체와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재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시간 정도 할 계획이고요. 저 뒤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도 한 시간 정도는 토론할 시간을 남기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은 정부조직법의 후속 법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명칭 변경 내용들이 많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숨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있는 국회기록보관소를 기록보관원으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차관급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현재 정원이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계획상으로는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관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드립니다. 사실 차관 한 명을 만들게 되면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비서, 승용차 등을 포함해서 수십억의 예산이 동반됩니다. 국가기록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450명 정도 정원이 있고요.

그런데 70여 명 정도 되는 국회기록보관원을 만들면서 이거를 굳이 차관급까지 승격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줄이자, 통폐합하자 하는 정책기조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말할 때는 멋있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방만 재정의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급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의문이고 이게 민생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

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현장의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편인데,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분풀이와 보복을 위해서 졸속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검찰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졸속 개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도 심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쪽에 집중해서 제 토론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검찰청 폐지 문제는, 사실 형사사법체계 변경은 민생에 직결되는 국가체계 변경인 만큼 상당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폐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먼저 서민과 약자들을 괴롭히는 민생사범에 대한 민생범죄 관련한 수사가 한없이 지연될 것이다고 예견합니다. 기소,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수사와 기소 간의 공백도 발생하고 사건이 지연되고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민생침해범죄의 증가 및 범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조작, 공정거래 위반 등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서 검찰 조직이 해체되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사라지고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진행이 장기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 안팎이던 경찰의 3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40%에서 60%까지 급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장기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수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 마비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한되어 있어 경찰수사가 누구 통제도 받지 않고 폭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경찰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16건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뇌물 2억 원을 받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의 구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 권력이 통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검찰이 폐지되고 국수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수청이 신설되면 이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위헌 논란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검찰총장인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게 되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법률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하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한마디로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조직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서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 만행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사실 지난해 취임 그다음 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무 시

작 하루 만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실제 그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방통위원장 임기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위인폐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통위 해체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행을 피할 수 없고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번 행동은 절대 다수에 의한 입법 폭력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 땡전뉴스라는 냉소적 유행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곧 땡명뉴스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송의 모습인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면 에너지와 환경의 부조화와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확보는 사실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환경보전에 존재 목적을 두고 있는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면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나 가스, 석탄 등 자원 확보 업무는 산업부에서 하고 전력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를 이원화하게 되면 긴박한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정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식의 원자력정책도 이원화되게 되고 국제 원전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볼 때 엄청난 불안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전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가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산업 경쟁력의 훼손으로 결국 귀결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둘 경우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의 가중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AI 반도체산업,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 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과연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국민을 괴롭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즉각 원점으로 되돌리십시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양성평등 개념을 부정하고 성평등 개념을 공식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해체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은 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게 되고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금융까지 넘겨 오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마지막에 바꿔서 금융은 결국 가져오지 못하고 아주 기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사실 검찰과 기재부는 이재명 정권에 일찍부터 찍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기재부, 매번 민주당 정권의 재정탕진이라든지 국가지출 확대 요구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했던 기재부도 이참에 해체해 버리겠다는 생각을 진작에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기획재정부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대해 보복성·분풀이성 해체를 진작에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었다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다' 그러고 기획재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시절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하면서 화를 냈고요. 최근에도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님은 추경편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재부에 대해서—작년이지요—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윤석열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등 뒤에 숨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당선인 시절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제가 기재부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기재부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쪼개 버리겠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겁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재부 힘을 빼기 위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재부 밑에 4개 청이 있습니다, 국세·관세·조달·통계. 그 청장들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에서 1급 출신들이 내려가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국세청장은 민주당 의원 하시던 분이 청장으로 내려갔지요.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나쁜 우려를 심어 줄 수 있고 세제나 국세청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승진시켰습니다. 차장들 다 청장으로 승진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직원들의 사기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재부 1급들 모두, 금융위도 그렇습니다만 모두 사표를 받았습니다. 아마 곧 1급 인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종전에, 정치 관련 부처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부처는 대체로 경제전문가의 시각이나 견해를 인정을 해 줬고요. 특히 직업공무원에 대해서는 존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급에 대해서 모두 사표를 받으면서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과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 막무가내식의 국회 운영은 지난해 말의 금년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비비 삭감 문제인데요. 기재부랑 실랑이하면서 몇천억 깎을 거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면서 정부가 증액 건과 연계해 가지고 못 받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50%를 삭감해 버리겠다 해서 50% 삭감했고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재정 운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알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도 전액·50% 삭감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정권 바뀌고 나서 이것 다 다시 살렸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기재부 자체를 해체해 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어떻게 보면 기재부 예산 기능을 약화시켜서 정부 여당 입맛대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를 총리 산하에 두게 되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마음대로 예산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고 기획예산처에도 있었고 예산청에도 근무했었고 재경원에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기획예산처, 예산청 시절이 제일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령을 내야 되니까 총리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경부장관이 부총리기 때문에 그쪽 말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안에서도 재경부에서 결산 기능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과 국고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협조 없이는 예산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쪽 입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말씀 들어야 되고 부총리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있는 각 수석들에 대해서 저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총리 밑에 있을 때는 그나마 부총리를 방패 삼아서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데 총리 밑에서 기획예산처 조직으로 재정원칙이나 규율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예산처로 만들겠다는, 기획 기능 없이 그냥 받아 적고 앞뒤 좌우 예산만 잘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재정경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금융이 빠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직원들한테 재정세제부로 추락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부총리 업무가 사실은 EPB부터 시작해서 재경원 이렇게 쭉 왔습니다만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기획 기능, 총괄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절 때도 피부로 느꼈고 현재 국회에 와서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권, 금융권, 세제권 이 정도고 그나마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법도 국회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예산도 국회에서 다 되기 때문에 개별 부처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굳이 부총리 입장이나 기획재정부 예산실·세제실 말을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소통은 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거의 다 변경이 됩니다.

예산 같은 거 하나 보시면요 예전에 제가 사무관 시절에는 국회에서 변경되는 게 몇 쪽, 한 4~5페이지 정도였습니다, 전후가.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모든 예산 항목의 한 반 정도는 국회에서 거의 다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부처에서 기재부 예산실에 대한 통제력이나 이런 것은 예전보다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 바뀐 그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과연 경제부처를 통할하고 조정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재정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통합하는 건 한 번 저희들이 경험을 겪었기는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 1999년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한번 했었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그리고 부처 간 갈등 문제, 재정건전성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2008년에 기획재정부로 다시 통합했고요.

그동안 한 17년 정도 됐지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그나마 잘 수행을 해 왔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여러 비판도 많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비판도 들었습니다만 그 비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년 만에 다시 해체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과오는 앞으로 몇 년 뒤에 바로 나타날 것이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재정 중독, 예산 폭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PT가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조작을 하나요?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권의 방만 재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정권 출발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경제 관련한 발언 이런 것을 한번 모아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0년이지요,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2021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대위에서 '평범한 나라들은 국가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다', 이것은 2021년 기준이니까 45%입니다. '국가부채비율이 100% 넘었다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 국가부채비율을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해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2022년 대선토론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이 국가채무비율은 85% 이내가 적정하고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것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팩트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IMF가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85% 이내로 유지하면 적정하다고요?

그다음에 2025년 금년 5월에 인천 유세할 때 '나랏빚이 10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둥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50%도 안 된다. 다른 나라는 다 110%다. 일본은 220%다. 국가부채가 48%, 50% 미만이면 누가 상 주냐'.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으로 취임 후 8월 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하실 때 '지금 씨앗을 한 됫박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 오든지 꿔 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 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것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시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방만 재정,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것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도 잘못된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라 전체가 골병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구윤철 부총리 발언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경제사령탑이지요. 자기는 중장기 재정건전론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거의 부연 설명하는 정도의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이 저하고 같이 예산실이나 다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던 구윤철 부총리 모습하고 상당히 달라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금년 8월 달에 무디스 연례협의단 면담할 때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부채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 운용하겠다', 선순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너무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성장이 어렵다.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GDP 분모가 커져서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했고, 이번 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AI 대전환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최근에, 며칠 안 됐지요, IMF 한국 미션단하고 면담할 때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정권 초보다 한 100일 지나니까 기재부에서 약간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적극 재정' 플러스 '재정건전성', 양두마차를 쫓겠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표현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 주재로 재정혁신 TF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재정 지출을 절약하고 또 세입을 발굴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재부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그 조직은 원래 그런 것 걱정하는 건데 마냥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따라가기에는 전문 부처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구윤철 부총리가 선순환 구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좋지,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겠지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와 대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보면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재정적자와 포퓰리즘의 파멸적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것은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에서 재정악화 우려로 벌어지는 일련의 국채금리 급등 상황에 대한 평가와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채권금리가 급등되고 또 정부가 긴축재정 하고 국민은 이에 반발하고 그러면 포퓰리스트가 득세하고 또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이런 악순환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가 적자국채를 매년 100조, 120조 정도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3500억 불 결국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국채금리 급등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구윤철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선순환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재정적자와 포퓰리즘의 파멸적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것은 현재 선진국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구윤철 부총리가 말한 선순환 구조가 될지 안 될지는 실제 그 나라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오히려 지금 선진국 사례가 더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가 하는 말은 글쎄요, 잘되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 하는 말도 이와 비슷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재정을 풀어 가지고 경제성장이 된다면 모든 나라가 다 빚내서 풀어야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지인들한테 가끔 드리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하는 모임이라든지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회비가 있지요. 그것 일종의 공금 아닙니까, 공금? 그런 동창회 회비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재정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만약에 구윤철 부총리 말씀대로 잘되면 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지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나랏돈으로, 공금으로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관건은 그렇습니다. 결국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에 그 지출 용도가 뭐냐? 생산적인 지출이냐, 낭비적인 지출은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 신성장 정책이라든지 AI 투자 이런 것 해야지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적정하냐, 감내 가능한 수준이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확장재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고려 없이 무리하게 막 쓰자고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여러 가지를, 기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추경이 있고 내년도 예산안이 있고 중기재정계획 했고요 장기재정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5년 계획은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했고 나머지 그 뒤의 40년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내에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을 해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경을 했지요. 당선되자마자 바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30조 5000억 정부안을 제출했고요 국회에서 조금 더 늘렸지요. 소비쿠폰 늘리고 지방 부담도 줄이고 해서 결국 31.8조 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결국 GDP 대비 -4.2%고요. 금년도 25년 예산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했던 것이고 본예산은 우리 재정준칙에 부합하는 -2.8%였습니다만 1회 추경을 거치면서 -3.3%, 2회 추경에서는 -4.2%까지 확대가 됐고 국가채무는 이제 1300조를 넘었지요, 1302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규모 문제도 있지만 저는 내용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 국민 소비쿠폰이 그 안의 대부분, 반 이상이지요. 15.1조 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당선축하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앞서 확장재정을 할 수 있지만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제성장의 승수효과가 높은 투자나 SOC 사업 쪽에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어기면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안겨 주는 부채주도 확장재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총수입은 22조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총지출은 54조가 는 728조, 700조 넘은 것 처음입니다. 넘는 것도 잠깐 넘는 게 아니고 728조로 훌쩍 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4.0%입니다. 그리고 총지출이 지금 728조라고 했지요? 8.1%입니다, 8.1%.

저희들이 사실 평시에 이렇게 재정지출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민생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재정은 사실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경제위기냐 하면 위기인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진짜 총지출을 8.1% 그리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51% 넘기고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을 넘어가는 -4%까지 확장할 정도로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 아닌 적은 없었어요. 다들 힘들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 힘드신 부분들, 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법률적인 측면,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화하는 것하고 총량을, 관리재정수지를 -4% 확대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충실히 하지만 총량 통제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까지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확장재정 이면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낭비성 포퓰리즘 예산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국 정권 바뀌니까 정부안에서 가져왔습니다, 24조 원을 위한. 정부지원은 1.2조 원이지요. 농어촌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했던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또 직장인에 대해서도 식비를 지원해 주자 이런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직장인 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인 식비 지원까지 국가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국민성장펀드 그 일부분이 내년에 또 들어 있지요. 정부는 생산적인 투자로 하겠다고 약속은 합니다만 약속대로 안 된 게 옛날의 녹색펀드라든지 문재인 정권 때 뭐였지요, 그때? 뭐 그런 펀드들 다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수익률이 높다고 막 자랑하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다 마이너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그런 관제펀드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전철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요—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PT 화면이 국가채무가 어떻게 정권별로 증가해 왔는지 하는 겁니다.

제일 좌측을 보시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저희들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15%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IMF 거치면서 19%로 올랐지요. 이것은 사실 IMF 겪으면서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25.7 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31.2 됐고 박근혜 34.1 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올랐지요.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확대재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아마 국가재정전략회의 같은데요. 홍남기 그때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지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그때 기준입니다—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40% 근거가 뭐냐?' 이렇게 추궁을 했지요. 그런데 재정 당국에서,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도 전통적인 예산실 출신 경제관료였고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제기준에서 생각하는 60%가 최종 파이널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가위기, 재정위기에 대한 20% 정도는 비축을 하자,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40%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는 게 재정 담당하는 공무원들 마음속에서는 일단 일종의 신조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근거가 뭐냐?', 정확한 근거는 없지요. 20% 정도의 비축 여분을 가지고 있자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40% 못 지켰습니다. 40% 못 지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45.9까지 갔나요. 2020년에 41.1까지 갔고 그 뒤에 정권 끝날 때 45.9까지 갔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사실 비율적으로는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나름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재정준칙은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수 펑크도 났고 또 여러 가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외 여건도 좋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나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추경을 한 번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추경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요.

중간에 세수 펑크가 났을 때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 내 자체 조정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예전에도 다 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다 대응을 했습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에 따른 연도 중 운용은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국회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요. 그것은 한 5조, 10조대 이야기고 40조, 30조, 60조 하면 무리가 나는 것 아니냐, 경제에 주름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수 펑크에 대해서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본회의 하실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때 아마 우리 원내대표 연설하실 때 같은데 100조 펑크 내 놓고 무슨 소리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데 100조가 펑크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돈을 국민들 주머니에서 안 받은 거잖아요. 국민들 주머니에서 안 받은 거고, 기업들한테서, 물론 기업들이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낸 측면도 있지만 계획대로 세입이 들어오고 계획대로 지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세입이 안 들어와서 지출을 못 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 세수 펑크 난 게 잘못한 거냐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걷어서 탕진하는 게 훨씬 더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 세수 펑크 난 게 잘못했습니다만 그게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확장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510조 정도 늘어날 계획이고요. 1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50%를 돌파하고 2029

년에는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사실은 58%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는 진짜 마지노선이고, 객관적으로 60% 넘게 되면 신용등급 강등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재정위기, 경제위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예비분을 이재명 정권하에서 다 털어먹겠다는 속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부예산 증가율을 보시면 내년에 8.1%가 많다고 했지요. 그다음에 2027년에 5%, 2028년에도 5%, 2029년에 4%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확장재정이고 이 추세대로 가면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지금 이건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대로 지켜질 거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가재정운용 발표할 때 5년간에 237조를 더 쓰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400조를 더 썼습니다.

PPT 화면 그 전 화면 보여 주실래요?

절대 규모를 한번 보려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보시는 것처럼 85조를 더 썼습니다, 전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채무가 150조 늘었고요. 이명박 시절에는 180조, 박근혜 170조, 문재인 정부 시절에 400조가 늘었습니다.

보통 김대중 정부 IMF 극복할 때도 100조 원 밑으로 막았고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위기 막을 때도 180조, 100조 원대에서 막았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110조 정도 늘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얼마나 늘리겠냐? 지금 이 표는 한 해의 표고요.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뒤를 보면 515조를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 끝나는 2029년도에는 515조가 아니고 600조, 700조를 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중간에 추경 한 번도 없다는 전제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경제위기, 민생위기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조건하에서 500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700조, 800조 그리고 국가채무 60%를 넘나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거 있지요. 다른 나라들은 국가채무비율이 대개 100%를 이미 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글쎄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올해 4월 IMF 기준으로 OECD 38개국 있지요 그중에 100% 넘는 나라가 9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영국입니다. 잘 보시면, 이 안에 보시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같이 기축통화국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돈 찍어서 나랏빚 갚을 수 있는 나라 무리가 있고, 그 외에 보시면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처럼 지금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부도 위기가 나오고 IMF 금융을 신청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비기축통화국이니까 비기축통화국하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54.5%입니다. 이거는 D2 기준입니다. 비기축통화국 전체 평균이 54.3이고요. 평균 벌써 넘어갔지요.

이참에 말씀드리는 게 D1하고 D2가, D2는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건데 D1하고 D2가 GDP 기준으로 한 삼사 %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GDP 대비 60% 우리가 기준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실제로는 육십삼사 %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을 벌써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우려되는 게 증가 속도입니다. 그다음 PPT 화면 보시면 최근 10년간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5.6%지요. 2등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국가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사실상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나 구윤철 부총리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21대 대선이었지요, 그때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참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진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비기축통화국하고 비교해야 된다' 이런 반대 논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논리로 답변을 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시면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GDP 대비 49.1%에서 중위 중립 기준으로 2065년 156%,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173%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지출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은 반등하지 않는데 인구는 줄고 재정지출은 계속 늘고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숫자가 17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GDP 대비. 앞서 저희가 60%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2.6배가 될 거다 하는 전망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랏빚이 불어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표를 보고 참 대단하다, 이제는 대놓고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대비되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장기재정전망은 5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이번이 3차 전망을 정부가 발표한 거였지요. 그래서 2차 전망을 보시면 그때……

2차 전망 표는 없지요?

2차 전망을 보면 그때 64, 제일 높은 숫자가 81.1이라는 것을 전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그때 홍남기 부총리였고요. 원래 실무자가 가져온 게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111%, 168% 이런 숫자를 가져왔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출증가율을 성장률에 연동해서 제한하자, 그래서 국가채무비율을 100% 아래, 81%지요.

81%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아이디어는 이거지요. 단순계산 해 보니까 110, 170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는 국가가 지탱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숫자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느냐, 나는 못 하겠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총지출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 전제하에서 다시 작업을 한 거고 그게 감사원에서 조작이다, 통계 조작이다 하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달리 평가를 하는데요. 장기재정전망의 수치에 대한 의미를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현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에 우리 재정 적자 수준이, 국가재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민들한테 알려 주는…… 시나리오별 수치를 알려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정책 의지를 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173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공공연히 천명하는 거기에 어떤 정책적 의지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재정 당국의 노력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나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총리였지만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그런 의지는 있었다. '기재부의 나라냐' 소리를 들으면서도 버티고 사표도 몇 번 제출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재정 당국의 의지와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안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 국민 앞에 '저는 이대로 쭉 확장 재정을 해서 저희들 국가부채가 GDP 대비 170%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를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경상지출을 10% 조정한다면 얼마, 110. 또 의무지출을 10~15% 조절한다면 얼마. 그런 수치를 보이는, 어떻게 보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계산은 하지만 자기는 책임은 안 지겠다.

옛날에는 재정 당국이나 기재부나 강단 있게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구윤철 부총리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하고 좀 달라지신 것 같아 의아스럽다 하는 평가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기재부 후배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OECD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는, 지난해지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보면 '공공재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없다면 공공부채는 앞으로 빠르게 증가한다. 그래서 GDP 1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을 준수하면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이 상당히 강화될 거지만 인구를 노인·여성·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한 개혁이 없으면 이 준칙을 고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런데 방만 재정을 억제하라, 재정준칙을 만들어라, 구조개혁을 실시하라 이런 OECD 권고에 대해서는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크게 귀담아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OECD였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OECD였던 것 같습니다. IMF인가 OECD인데, 앞서 제가 국가채무비율 170%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

데 OECD도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채무를,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70%대, 80%대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하물며 다른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재정 절감 노력, 재정 혁신 노력을 통해서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재정 당국에서 그런 인식이나 접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재정전망은 그냥 숫자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하는 정부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확장재정을 한다고 이재명 정부가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더구나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보장 없이 확장재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상 재정건전성 관리를 안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사례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국민들은 데모하고 총리는 네 번째 탄핵당하고, 그런 프랑스가 지는 국가채무비율이 114%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50, 170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156.3%가 돼도 괜찮은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일전에 제가 예결위에서인가 한번 보여 드린 것 같은데 장기재정전망입니다. 물론 조건도 좀 다르고 기간도 다르지요. 그래서 그나마 공통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OECD에서 각 국가별 컨트리 리포트(country report)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서 만드는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거기 보시면 미국이 이 통계에서는 99.9로 나오는데 2060년에 159 정도로 가고요 영국은 96에서 167로 갑니다. 독일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나라지요, 국가채무 이런 게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이 나라는 63에서 73 정도 40년 뒤에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호주는 오히려 떨어지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보시면, D2 기준입니다. 죽 올라가서 이 통계는 47.8인데요, 아마 2000년대 초반 숫자 같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47.8이 161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OECD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내기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다른 국제기관에서도, 객관적인 컨트리 리포트에서 OECD 직원들이 분석한 페이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장재정을 해도 된다, 다른 나라는 100%까지 현재도 넘는데 우리나라는 50%도 안 되니까 더 써도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재정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지요.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없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줄여야 될 타이밍인데 오히려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재정 분야를 오랫

동안 보다 보니까 국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 그리고 중앙정부가 할 일, 지자체가 할 일 이런 걸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시장 기능을 상당히 훼손하고, 물론 정부 돈으로 해결하면 좋지요. 제일 편하지요. 시장 기능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만 해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디로 뻗어 나갈지. 시장에 의존할 수는 없고 그 아우성치는 농민들, 취약계층들, 확실하게 손에 보이는 성과를 안겨 주기 위해서는 재정으로 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손쉽지요. 그렇지만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모든 걸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전 국민 소비쿠폰 이런 것 말씀드렸지요? 소비쿠폰을 뿌렸더니 골목상권이 살아나더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냐 이걸 말해야지 뿌리면 당연히 살아나지요.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와서 갑자기 매출이 증가되는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매출이 10% 늘었더라, 20% 늘었더라, 살아나지요, 10%. 그런데 승수가 그 정도 안 되잖아요. 100을 쏟아 가지고 10, 20 정도 효과밖에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쿠폰을 뿌려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소비지출 심리가 회복이 된다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살기 힘들지만, 봉급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500만 원만 은행에서 빚내고 싶잖아요. 500만 원 빚내 가지고 살면 좋지요. 그달은 생활이 편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여가 활동도 하고. 그렇지만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재정은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남의 돈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깊숙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은 저는 그런 시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펀드는 성공할……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다 하는 민간 펀드들도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펀드가 투자하면 성공합니까? 깡통펀드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50조 국민성장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금은 확실할 때만 써야 되는 거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150조를 투자해 가지고 깡통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LH 주택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 토지를 민간 건설기업한테 줬더니 땅장사 하고 제때 주택공급이 안 되더라, 그래서 LH에서 조성하는 모든 토지는 민간한테 주지 말고 LH에서 직접 하자. 편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지요.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될지, LH가 직접 해 가지고 그게 미분양돼 가지고 돈이 잠기면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집이 없어 가지고 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LH 빚이 뭐 중요하냐, 한 채라도 더 지어서 빨리 조기에…… 민간들 공사비 오른다고 해서 착공 승인받아 놓고 3년씩 5년씩 자기 좋을 때까지, 자기 돈장사 하기 가장 높은 수익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못 보겠다, 빼뜰어 가지고 그 땅 위에 LH 돈으로, 국가재정으로 바로 지

어서 한 채라도 더 빨리 공급하자. 좋지요. 돈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대표적인 법이지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왜 행사했을까요, 농민들한테 인기 떨어질 것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정부나 정치권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뭐 하러 거부권 행사합니까. 돈 써 가지고 양곡 사 주고 쌀값 보상하고, 오히려 양곡 수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쌀값이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풀 수도 없고, 추수기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을 결국은 자초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이라든지 농업재해법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때는 사실 합의 통과도 하고 쉽게 넘어갔습니다만, 실제 재정 소요가 크지 않더라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만 돈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굉장히 왜곡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지요. 자연재해로 보상금을, 보험금을 받았어요. 배상을 받았는데 '보험료는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민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험제도하에서,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보험 처리받아서 보험금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보험료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요. 그게 안 올라가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물론 정부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바람직한 시장경제입니까. 농민들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경제단체들이, 경제주체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정부는 어떻게 막을 건데요? 그래서 확장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포퓰리즘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직장인 든든한 한 끼 말씀드렸지요. 지역상품권 말씀드렸고 또 아동수당 문제도 있고요. 빨리하면 좋지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지마 빚 탕감 정책도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싹싹 빚 탕감시켜 주면 좋은데 이게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성실하게 납세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때 정부 정책이 금리라든지 분할 기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지요. 누구는 빚을, 원금을 탕감해 주는데 이자 조금 깎아 주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덕적 해이가 치유될까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210조 든다고 발표를 했지요.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여기 보이고요 5년간 210조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 그 안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주민 소득 지급,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계획대로 하면 매년 세입을 19조 늘리고 지출을 23조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5년간 세수 증가액은 35조밖에 안 됩니다. 계획하고 58조 차이 나지요.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세금을 더 거둘 건가요? 지출 구조조정 23조 하겠다는 것도 현실성은 없습니다. 금년에 27조 했다고 하지만 내역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요 통상 하는 것은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한

27조를 다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쭉 4년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미 투자 3500억 불 현금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의 85%지요. 정부 예산의 72%, GDP 19%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사실 합의됐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잖아요, 3500억 불. 물론 그 당시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와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합의서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완벽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해 놓고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배수의 진을 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문제가 꼬이고 꼬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이걸 풀어 나갈지 여러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잘 해결되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중요한 재정준칙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정준칙은 사실은 건전성을 고집하는 기준이 아니고 방만 재정을 막는 기준입니다. 한 정권이 5년 만에 나라를 거덜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지요. 국민과의 약속이고 미래세대와의 약속입니다. 그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한다는 거는 방만 재정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앞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소개드렸지요.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현재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둘 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처음 추진한 게 문재인 정부 때였지요. 그때 산식은 좀 복잡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 60%를 나누고요, 분모로. 통합수지 -3%, GDP -3% 이 2개의 변수를 분모 분자 나눠 가지고 곱해서 1.0 이하로 되자 하는 거였는데 조금 복잡하긴 했지요.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딱 두 가지 숫자만 냈지요. GDP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60% 이내에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는 확대재정 주장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책임한 거다, 5년 정권이 대한민국 전체, 앞으로 장기재정을 망치겠다 하는 선전포고와 함께였고 오히려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이런 준칙하에서 내가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껏 쓰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60%, -3%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거는, EU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EU가 탄생하면서 이게 EU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가 재정을 낭비한다든지 해 가지고 EU화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주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U 국가들에 대한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비율은 60% 넘으면 안 된다 하고 재정적자도 -3%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있고, 물론 예외는 있지요. 넘어도 됩니다. 넘을 경우에는 특별한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넘을 경우에 넘는 금액에 대해서 벌금 성격의 페널티까지 내야 하는 그런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관리재정

수지 -3%라는 거는 이게 맥시멈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니멈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적자재정 1~2%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최후의 경우에 -3%까지 확대를 하고 그걸 넘는 경우에는 진짜 극단적인 조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3%는 그냥 해도 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거고 3% 이상 적자를 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나중에 제가 국가신용등급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주목하는 게 60%, 3% 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넘으면 예의 주시를 해요, 위험한 국가로. 그런데 우리는 이걸 3%를 넘어서 4%, 5%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이 -3% 기준을 6년째인가, 5년째인가 어기고 있지요. 이재명 정부 끝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째 어기겠다는 건데 그렇게 어기고도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설명은 좀 드릴게요. 60%, 3%가 어디서 나왔느냐? EU에서, 그러니까 명목GDP 성장률을 5% 정도로 봤을 때 국가채무비율을 6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5%에 대해서, 60%에 5% 하면 3이잖아요, 3. 그래서 -3%까지는 나더라도 국가가 한 5% 정도는 성장을 하니까 균형적으로 60% 정도의 국가채무비율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EU 국가에서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장기 국가채무비율을 173%까지 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건지, 책임 있는 재정 당국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 입장에 대해서, 말 바꾸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정당국의 입장 변화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기재부 차관이지요, 처음에 정권 초니까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서 함부로 반기를 들거나 하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 3% 적자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게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재평가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재정준칙을 포기하는 입장, 이번 정권 내에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가능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약간 장기적인 건전재정도 감안하면서 확장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꼬리를 살짝 내리는 게 있는데 하여튼 기획재정부는 5년의 역사적인 책무에 충실해서 재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선배들이 쌓아 온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수 펑크 나도 추경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또 법안을 냈어요. 원래 세수가 펑크 나면 사실은 세입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오는 세입하에서 살림을 알아서 살아야지요. 세입은 안 들어오는데 지출은 원래 계획대로 하는 그것은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 이 법안 자체가 앞으로 확장재정을 더 강화하겠다,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재부에서는, 제가 한번 세어 봤어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항상 포함됐거든요,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서. 그런데 금년에 발표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재정준칙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안 하겠다는 것. 밀리고 밀리면 어느 정도 하겠다는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재정준칙을 도입해라. OECD 국가 중에 재정준칙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준칙 없이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특히 말하는 게 IMF에서는 재정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라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프레임워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해 정도는 적자 수준을 조금 확대할 수 있지만 3년 내지 5년 단위 안에서는 건전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면 금년은 힘드니까 내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1% 총지출 증가율을 했지만 그러려면 그다음에 정권 2차 연도 3차 연도는 더 줄여서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지난번 코로나 때 재정지출을 엄청 늘렸지요. 엄청 늘렸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그 뒤에 코로나 위기 끝나고 일이 년 뒤에 예전 수준으로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끝도 없이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IMF가 제안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심하게 재촉은 안 하는데 곧 몇 년 내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하고 싶으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됩니다.

확장재정을 할까 말까는 사실은 경기 조정 기능이거든요. 재정은 사실은 경기 조정 기능은 아닙니다. 주기능은 아니지요. 부수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기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확장재정 여부를 할까 아니할까 이것은 경기 조정 기능이고 재정준칙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 조정 기능을 하기는 하더라도 미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IMF 이야기를 또 드릴 건데요. IMF에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개혁이 시급하다' 이렇게 상당 부분 강조를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라든지 S&P, IMF 한국미션단 부총리 면담이라든지 관계기관 면담 이 사례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출장 오시는 분들은, 미션단장은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하는 말은 정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 생각은 그분들 하는 말은 똑같은데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기획재정부나 정권에 유리한 쪽 입장만 코멘트를 따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강조하는 게 '정부의 확장재정, 성장을 위한 AI 투자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들은 계속 언론에 흘리고 보도자료도 나오는 반면에 그 보고서 뒤편에 있는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된다. 재정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말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재정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는 재정건전화 노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개혁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OECD에서도 한국경제보고서 2024년도 보면 재정준칙을 채택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24~25년은 재정지출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국가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재정 리스크가 크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부담이 된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언론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KDI에서도 얼마 전에 경고했습니다. 정부 지출의 지나친 확대가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시키고 국민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운영이나 우리의 건전재정 관리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미는 없지요?

그다음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 있냐, 제가 이런 말씀 앞서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금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피치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새 정부의 재정 완화 정책이 향후 몇 년간 재정수지와 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신용 프로파일 약화시킬 수 있다.

무디스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이 있지만 향후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등으로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신용등급 기관들의 보고서를 가끔씩 봅니다. 보면 예전에는 중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말하는 보고서가 가끔 있었어요. 단기·중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것 하다가 최근 보고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중기 이후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단기가 몇 년인지,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 내에 그 위기가 올 거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신용등급 강등을 당할 그런 위험은 없느냐, 다른 나라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요.

미국도 신용등급 강등당한 것 아시지요? 올해 5월 달에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국가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신용등급 강등당했습니다.

중국은 가운데에 있지요. 중국도 올해 4월 달에 한 등급 강등시켰지요. 지금 국가부채비율이 88% 수준이고 이때 강등당했을 때 국가 총지출이 5%인가, 5~6% 정도 늘었어요. 그 정도 늘었다고 해서 위험하다, 국가채무가 급증세라고 하면서 중국 한 등급 강등

시켰습니다.

프랑스 사례는 좀 중요해서 제가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조만간 닥칠 얘기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사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례가 재밌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부채가 GDP 대비 116% 정도 됩니다. 유럽에서 3등입니다, 그리스·이탈리아에 이어서. 그리스·이탈리아는 다 국가위기를 겪은 나라고. 지금 116%가, 프랑스도 2000년대에는 5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20년 사이에 두 배가 늘어난 거지요.

마크롱 대통령이 들어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만 야당이 반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안이나 예산안이 부결되고 총리가 네 번째 교체가 됐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저 표를 봤습니다만 97년 10.8%에서 지난해까지 27년 만에 4.3배가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25년 만에 2배가 늘었지만 저희들은 프랑스보다도 거의 한 2배 정도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사례를 그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정치권이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재정 중독에 빠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프랑스 국민들은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나라 전체가 국가채무가 얼만지, 자기만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요. 왜 내 연금에 손대고 내 의료개혁에 손대냐, 다른 데 가서 해라. 그래서 정치권이 잘해야 됩니다. 국민들 재정 중독에 빠트리고 재정 개혁을 외면하게 되면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피치가 한 단계 강등시켰고요. 역대 프랑스 정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냐? 2년 전에 한 번 더 강등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낮은 단계고 역대 최저 단계고.

그래서 피치가 하는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피치에서는 프랑스 재정적자가 GDP 대비 3.1%다, 유로존 평균. 그러니까 유럽 평균이 -3.1%입니다. 저희들 지금 -4%, -5%를 9년째 10년째 하자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지요, 엄청난 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강등한 이유가 재정적자가 -5.8이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 각각 -5.6, -5.5 된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3%까지 줄이겠다 정부가 발표했는데 피치가 보기에는 당신들 그거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그냥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S&P도 같이 했지요. S&P는 아마 작년에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긴축으로 했지만 야당이, 지금 프랑스는 극우·극좌가 다 야당이거든요. 거기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된 이유는 과도한 복지 지출 확대, 코로나19 때 포퓰리즘 낭비성 예산 이런 것들로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만성화돼서 단기간에 이렇게 나라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감세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국민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하자 그러니까 여야에서 다 반대하고 여론은 반발하고 전국적으로는 시위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이 한 발언을 제가 좀 소개할 건데요. 이거 새겨들어야 됩니다.

긴축재정을 추진하다가 쫓겨난 바이루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경고인데요. 엘리트들이 진실을 거부하도록 이끄는 나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지식층이 제대로 알리라는 거지요. 지식층이 일반 국민들처럼 입을 닫고 있거나 정치권이 오히려 선동하게 되면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장관도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용등급이 하락된 것은 프랑스가 지난 수십 년간 재정 방만 그리고 사회주의식 국가 운영에 대한 응징이다, 오늘 우리가 취하지 않는 모든 조치는 내일 미래세대한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재무장관은 물러나면서 정부가 재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사실 IMF 구제금융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기재부장관이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국민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IMF 위기 또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 중독된 프랑스 국민들은 이 정도 말을 해도 전혀 안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프랑스 지금 사태가 어땠냐? 신용등급이 강등되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피그스(PIGS)라고 재정위기 한 나라들 있지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은 투자처로 해서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례는 무분별하게 재정을 지출하고 과도하게 복지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국민들한테 재정 중독의 맛을 들이면 얼마나 벗어나기 어려운지 이런 걸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고.

OECD 국가 중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재정 중독의 함정에 빠진 프랑스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2시간 정도 했는데요 조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 하는 의원 있음)

더 할까요?

(「예,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심보는 국가채무비율 60% 도달할 때까지 국가재정을 마음껏 퍼먹자는 거로 결론을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신용평가기관, IMF가 말하듯이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은 너희 아직 60%는 안 넘었으니까 내가 신용등급 강등 조치 검토는 아직은 안 하겠지만 넘는 순간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58%라는 숫자를 했지요. 이게 D2 기준으로 하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말하는 60% 그거 D2 기준으로 보면 이 58은 6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정부는 D2 기준으로는 국제기준을 넘겠다, 정권 내에. 그거 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한 600조 정도 되거든요. 600조 정도 더 쓰겠다. 문재인 정부 때 400

조 더 썼지 않습니까. 한 600조 정도 더 쓰겠다는 거고.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200조 정도 더 쓰겠다고 중기계획 발표하고 나중에 400조 더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게 아까 550조 정도 더 쓰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정권 끝날 때쯤에는 700~800조, 1000조까지도 더 쓸 수 있다. 추경을 할 거잖아요. 지금은 추경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만든 국가재정운용계획인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재정전망을 173%까지 올리겠다, 올릴 수 있다 이걸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홍 부총리가 통계 조작해 가지고 81%나 숫자를 만들어 냈다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잖아요, 조작했다고. 그 조작이 그나마 귀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5년 내에는 60%까지 다 쓰고 장기적으로 170%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재정지출 구조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거거든요.

저와 같이 재정을 쭉 봐 온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무책임하고 도발적이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좋은 말로 성장을 위해서 지금 마중물을 뿌리겠다, 확장재정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분모를 키워서 오히려 국가부채비율을 떨어뜨리겠다, 이거는 다 말장난이고 헛소리고요.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게 안 될 경우에 그 돈 누가 다 갚는데요?

그래서 무책임한 낙관론에 기대 가지고 부채를 마구 늘릴 경우에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훨씬 넘어선 일본, 이탈리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더 늘릴 수 있다고, 옆집에서 한 됫박을 빌려서 지출하자고 그렇게 국민들을 현혹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허리띠 매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성장에 지출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임기는 사실 5년입니다. 5년이지만 국가재정은 앞으로 50년, 500년 해야 할 미래세대의 자산이고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한 정권에서 지금까지 지켜 온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는 그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장 재정을 하고 싶으면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준칙하에서 건전재정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 곳간을 내 마음대로 퍼먹겠다 이런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는데 더 할까요? 민주당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만하셔도 되고」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재정 교육을 좀 해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많이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잘하셨고 요약 정리해 가지고 2시간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바통을 넘겨주는 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오실 거기 때문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정도는 남겨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되고 성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됩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분야에 쓰고 싶으면 다른 분야 지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R&D 예산 같은 경우에 많은 비판을 했지요. 왜 그것 손을 대 가지고 충청·대전권 표 다 날리고 그렇게 했냐 했지만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잖아요. R&D 예산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R&D 성과물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거든요. 투자는 강화해야 되지만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고,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R&D 예산을 손본 것은 잘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실 한 이삼 년 했어야 되거든요. 이삼 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1년만 하고 안 하느니만 못한, 괜히 선거만 지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공격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R&D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도 각별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한테 하는 충고가 있어요. ‘1조, 10조 아끼려다가 정권 뺏겼지? 삼사백 조 한 방에 날아가니까 좋냐? 추경호 대표 때문에 선거 졌다. 돈을 풀어야지, 바보같이. 뭐 하려고 쥐고 앉아 있냐’ 이런 말이 굉장히 아프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정을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켜져야 되는데 이 재정을 방만한 재정으로 운영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국민들한테 재정 중독의 맛을 들이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정국이 될 수도 있는데 여야가 그런 식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한국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표를 좇는 그런 정치와 예산 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먼 미래세대 장래를 본 재정 운용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여야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때…… 물론 그런 정략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여야 마음 중심에는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든지 그런 노력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재정준칙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도 깊이 있게 진심으로 준칙 수립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장 재정을 하고 싶으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확장 재정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이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안태준)

(18시01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안태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준 의원 기회를 주셨으니까 또 해야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안태준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국회부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입니다. 아무리 미루어 봐도 내란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터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역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는 것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새 정부의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상식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야당, 나아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께서도 필리버스터의 유래를 잠시 설명하기도 했지만 저도 간략히 필리버스터의 유래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본격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필리버스터의 기원은 어원으로 보면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네덜란드어 하이바이터(vrijbuiter)—자유 약탈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 등을 거쳐서 영어에서 정치적 의사진행 방해의 의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원래는 해적 같은 의미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소수파의 전략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가 됐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19세기 중반부터 상원 등의 발언시간 제한 없이 소수파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다수당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컨대 클로처(cloture) 도입 이전에는 발언 제한도 거의 없었답니다. 소수당이 오랜 시간 연설하거나 논의를 이어 가는 방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헌의회 때, 즉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제헌국회, 초기 국회 때 일정 부분이 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소속일 때 구속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5시간 19분간 연설한 것이 최초의 공식적 필리버스터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제한, 45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결 절차도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투표로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종결에 필요한 찬성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언자는 1인당 1회 발언으로 발언 내용은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하시는 거 보면 거의 해당 의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들만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운영이 되면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났는데요 쟁점 법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운영상의 갈등 등이 부각되고 있어서 주요 문제점들을 간단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거나 발언 내용이 법안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때 이화영 판결문을 낭독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선진화법 도입 당시에는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여당이 회기를 쪼개거나, 우리 여당도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회의 일정을 조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회피하거나 종결시키는 방식도 자주 썼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길어질 경우에 국회 본회의 일정도 당연히 지연되고 꼭 필요한 다른 법안 처리나 국정감사 등 다른 의사일정이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보셨겠지만 의원들, 보좌진들 그다음에 국회직원들 또 여기 앞에 계시는 속기사 등 실무자들의 부담도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이렇게 다른 당의 국회부의장이 아예 사회를 거부해 버리면 24시간 동안 국회의장님과 부의장, 그것도 24시간만 하는 게 아니지요. 며칠째 계속되는 동안 8시간 맞교대에서 6시간 맞교대, 제가 얼른 보니까 이제 한 4시간 맞교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쉬실 틈은 주시는 겁니까?

아까 다른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던데 이렇게 유능하고 비싼 인력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인력들이 도대체 이 국회에, 여기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회의가 듭니다.

실효성에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한다고 필리버스터를 쓰고 있겠지만 저희가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결국은 24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되지도 않는 법들 그리고 비쟁점 법안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정부조직법에까지도 필리버스터를 걸고 정부조직법에 따라가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게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상당히 실효성의 한계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발언 내용이 안건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본래의 관련 토론을 넘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언론 대응용 발언을 한다거나 자신의 치적 과시용의 발언을 하게 되면 이런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제

재할 수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장기간의 필리버스터는 여러분도 다 보시겠지만 지역구에서 도대체 왜 국회에 가는 것인지, 텅 비어 있는 국회 자리는 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왜 지역구 활동이나 법안 활동이나 국회에서 민생활동은 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지키러 가야 하는 것인지 지역구 구민들조차도, 우리 국민들조차도 다들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의 개선 방안들도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완화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언 관련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중 발언이 해당 법안, 안건과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의장께서 발언 주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언 주제와 관계없는 낭독을 한다거나 개인을 비난한다거나 언론 대응용 발언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결 요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야당과 합치면 종결 요건인 5분의 3 찬성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것을 제대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히 종결시간을 정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을 정하고 최소시간 보장을 한 후에 토론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결 또는 법안별 중요성에 따라서 종결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도, 그러니까 조건부 클로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법안을 분류하고 긴급 법안 처리 절차를 정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국민생활이나 긴급한 행정,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거나 필리버스터 적용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세법, 긴급명령 관련 법들은 필리버스터 제약하에 처리하도록, 필리버스터에 제약을 걸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횟수 제한의 유연성도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인당 1회 발언 규정은 있지만 발언시간 혹은 전체 연설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발언시간 기록 세우기 경쟁을 하듯이 누가 몇 시간이기 때문에 몇 시간 더 해서 반드시 이 기록을 깨야 되겠다 이런 의미 없는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발언시간이 너무 길면 중간중간 발언을 끊는다거나 여러 명이 릴레이발언을 하더라도 전체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및 상임위 안건조정기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의 사전 승인을 강화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제도화해서 본회의 상정 전에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의 단계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 가능한 구조를 보장하는 것도 물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도 평가 및 수정 주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마다 효과 분석이나 여론평가를 통해서 국회운영 관행 및 국회법을 적절히 개정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 사용빈도, 시간, 법안처리 지연 정도, 국민평가 등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논의의 숙성 등 의회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제도 취지가 흐려지고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되면 국민 신뢰도 저하되고 국회도 파행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비쟁점법안, 특히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대단히 느려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외 사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등의 필리버스터 사례를 잘 연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를 다른 방법으로 이어 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이 법안 처리에 잘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대화와 설득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모두 뿌리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비쟁점법안 60개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했을 때 정말 저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일원인 것 맞습니까?

결국 금융 개편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극단적 반대로 6개월 동안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통탄스럽지만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규탄합니다.

급기야 무분별한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까지 저지하겠다고 나섰는데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것이 역대 최초라는 것을 정말 국민의힘은 알고 있을까요?

더욱 치졸한 것은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이중성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신속한 정부조직 개편이 국정안정의 핵심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며 극단적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파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개혁과제입니다. 부처 권한을 조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하더니 이제는 필리버스터로 사실상 모든 법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언급한 당선 무효, 대선 불복을 위한 정략적 국정 방해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 정치 공세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는 곧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발목 잡기입니다. 국회 마비는 입법 지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쇼와 정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와 장외 공세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과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극단정치를 멈추고 국정운영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단초가 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개편 배경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새 정부가 내건 국정과제,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공정·형평성 강화 등을 조직체계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기존 조직구조의 경직성과 기능 중복, 권한 집중 등의 구조적 비효율 문제와 정책 일관성 확보와 부처 간의 협업 강화, 권력 분산 및 책임성 강화 등 이번 개편안은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처를 3개 신설하는 등 조직 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변화로는 대체로 다음 조치들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분리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환경부를 확대하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서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겸임하는 구조를 신설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를 도입을 했고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등의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방향성은 정부가 국정과제 중심 조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 방향이 조직 내부구조 논리, 권한 배분 메커니즘, 이행 가능성, 제도적 안정성 등 이것을 얼마나 설계했느냐입니다. 따라서 이후 각 개편 방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세제, 국고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장은 국무위원, 즉 장관급으로 보임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예산 기능 분리의 위험성이나 이전 조직 간 조정 비용 및 갈등, 책임 배분 모호성 등의 비판 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이행 방식을 통해 먼저 시범 부처 또는 분야에서 정책·예산 분리를 시범적용해 보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적용하거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관련 부처 간 조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면서 정책·예산 간 불일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책임 배분 메커니즘을 명문화해서 정책 실패 시에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책 부처와 긴밀한 협업구조를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집행 이후 성과 검토 및 보완구조를 두어서 정책·예산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검찰청 얘기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

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 폐지 조항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유예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립성 보장 강화,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예를 들면 임기 보장이나 인사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기관 간 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호 감시 및 조정 기능, 예를 들면 검사수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인력 재배치 및 시범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사건 또는 일부 수사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분리 적용하고 과도기 매뉴얼을 마련하는데요. 사건 이관 절차와 권한 충돌 조정 매뉴얼, 책임 소재 규정 등을 사전에 정비하고 조직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초기 혼란의 최소화 전략 마련 등의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의 일부, 전력·재생에너지 등을 이관받아서 확대 개편하고 새 부처 명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단, 원전 수출 및 자원산업 관련 기능은 여전히 산업부 소관으로 남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단순화했습니다. 환경 기능과 에너지 기능을 내부 부서로 분리하되 상호 조정 메커니즘을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부처 내 조정위원회에서 충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부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및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과 에너지 사이의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 또는 규칙으로 명시하고 개편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부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수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한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 및 각 기능별 권한 범위를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인선 기준, 전문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통계 발표 권한의 독립성, 기관 내부 보장의 메커니즘과 권한 분산 장치의 마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법령 또는 규칙으로 데이터 기능 또는 과기부·행안부 등과 공유를 조정하고 데이터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복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부 데이터 기능을 이전하고 평가해서 데이터 통계 처리 기능을 내부 조직 구조 차원에서 분리 유지할 것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허청에 대한 얘기입니다. 총리실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특허심사, 분쟁조정, 정책기획 등 기능별 역할을 법령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부·과기부·문체부 등과의 지식재산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 보장 및 인사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초기 운영 평가를 통해서 조직 구조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 부총리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정책 중심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겸임하는 구조를 새롭게 두고 과학기술 및 AI 정책 등 미래형 과제를 중점 강화하는 조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정책 조정 권한, 인사 조정 권한 등을 법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부총리직의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부총리 산하에 과기정책 조정기구 설치를 해서 R&D, AI, 디지털 전환 등 과제 중심의 협업 조직 또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부총리·장관 역할 간의 경계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요. 부총리 제도 정착 이후에 일정 기간 평가 및 제도 보완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차관 중 한 명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법률 또는 부처 내의 규칙으로 각 차관의 담당 분야를 세분화해서 차관의 역할·범위·책임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고요. 차관 간의 조정회의, 당면과제 우선순위 조정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복수차관제 도입의 비용과 기대 정책효과를 미리 분석해서 우선 소상공인 분야 등 특정 기능 중심으로 차관 역할을 부여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차관제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내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직업건강 등 노동 현장의 안전 강화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부와 기존 노동 정책 기능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평가 및 조정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조 보완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성평등 중심 정책과 기존 여성가족 기능 간 역할 분담을 법제화하고 예산 확보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성평등 정책역량 확보계획을 선제 수립, 부처 간 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평가 구조를 마련해서 성평등 기능 강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대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정과제 중심 조직으로 구조를 전환하게 됐습니다. 기후, AI, 데이터 형평성 등 미래 과제의 조직적·구조적 뒷받침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직 간의 경계 재정비를 통해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데요. 부처 간 기능 조정 및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총리실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권력 분산을 통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권한을 재배치하고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말씀입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로 형사사법체계의 혁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했는데요. 국가데이터 정책의 통합 관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혁신 중심 조직 위상을 강화했는데요. 과기부 중심의 미래 정책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상 쟁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계적으로 이행 방식을 적용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조직 개편을 일시에 시행하기보다는 일부 부문 또는 파일럿 부처에 먼저 적용해 보고 평가 후에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인력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여지를 두어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조정기구 및 협의체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처 간 조정위원회, 예를 들면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는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등 기관 간 상호 견제, 협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책임 배분 및 통제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및 부처의 책임소재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환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서 조직 개편 이후에도 조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립성 보장 조항을 삽입했는데요. 통계·수사·공소 기능 등 주요 기관에 대해 독립성 보장 조항을 법률 수준에서 삽입, 예를 들면 임기 보장하고 인사 독립성, 외부감사 기능 강화를 법률 수준에서 삽입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피드백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직 개편 및 시행 이후에 1~2년 주기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유연한 구조를 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참여 강화 및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개편안 제출 전에 충분한 국회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치면서 그런 절차를 강화해서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상임위의 역할을 조정하고 입법 검토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충원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업무 이관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과 위험 시나리오를 미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경계 조정 및 역할을 명확히 했는데요. 부처 간의 역할 경계를 명확히 정하고 중복 기능을 최소화했습니다. 기능 조정 시에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문 보고서를 인용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역대 정부조직 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와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7월 14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 출범하였습니다.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에 따른 중간선거를 통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범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정부는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준비해 왔고 6월 16일 자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약 두 달간의 활동을 통해서 새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제시했고 세부 과제 및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별도의 정부조직 개편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 배치하고 AI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 등이 새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성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출범 전후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혁신 및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대선공약을 국

정과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운영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축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바람직한 정부 기능 수행,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 비전 현실화 및 미래 관리를 위해 시대 상황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해 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부·처·청 수준의 중앙행정기관 개편과 기관의 명칭 변경, 소관 기능의 신설·이관·폐지 등이 대표적인 행정기구 개편의 양상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정치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 구상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국정기획, 죄송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정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과 향후 개편 시의 고려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역대 정부조직 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검토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시의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일반적으로 부처 단위의 조직 신설, 통합, 폐지, 기능 재배분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 개별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완료되는 사안입니다.

정부조직은 법률에 의해 구성되어 입법자의 입법 성향에 따라 그 조직이 존폐되는 등 개편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율함으로써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는 정부조직 개편이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근거해 이뤄지게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가능성,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부응해서 제헌국회 때부터 제정된 것이 정부조직법입니다. 당시 법률 제1호로 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3조에. 이는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체계 있는 국무수행을 기하기 위함이다, 제1조 8항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도 이러한 이념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다, 제1조 10항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부처 신설이나 폐지, 기능 재배분 등 구조적 차원에서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법적으로는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방식을 정부조직법상의 규정을 예로 들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 수준의 신설이나 폐지 등의 개편은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해당 부처에 관한 별도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의 통할하에 두는 행정각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겨우시지요? 저도 상당히 지겹습니다.

현재 행정각부는 총 19개로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순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는 개별 근거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사무 범위

가 광범위하여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 정책 조정을 위해 부총리제가 선호되기도 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9조에서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 수행을 위해 부총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요. 겸임하는 장관이 열거되었고, 이건 제3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제4항과 제5항에는 각 장관이 통할하는 정책 분야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서 관계 중앙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사업 또는 서비스 중심의 조직 개편을 위해 행정각부의 소관 사무에 관한 개별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도 합니다. 복수차관, 제2차관이나 정부조직법의 제26조제2항에 있는 복수차관, 제2차관제를 말합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 5항의 차관급 조직의 신설 또는 폐지 또한 위 목적과 관련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절차와 일정은 정권 및 세부적인 개편 내용, 여야 구성 및 합의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정을 거칩니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담당할 별도의 추진 체계를 구성해서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뒤 정부조직법 등 법령 개정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나 합의에 따라 기획된 조직 개편안과 실제 조직 개편이 차이를 보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속 개편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작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새정부 출범 전 이러한 과정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어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이 단행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우리처럼 정부 출범 이후에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임기 중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민정부 이후를 중심으로 역대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작은 정부 지향의 통합·축소 개편을 했었지요.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은 문민정부가 당면한 대외적·대내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설 당시 세계적 추세였던 작은 정부를 특징으로 하는 행정개혁의 물결이 국내에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김영삼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원칙을 제시하고 신공공관리 관점에 입각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1960년대 정부주도형 개발전략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명분에서 이루어졌으며 확대지향적인 과거 정부조직 개편과는 달리 축소 조정의 기조하에서 이루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총 4회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제1차 조직 개편은 취임 전에 실시되었고 총 1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처 통합을 통해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문화체육부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상공자원부로 각각 개편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기구가 기존 2원 16부 2처 15청에서 2부가 감소해서 2원 14부 6처 15청으로 변화했습니다.

한편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제2차 개편입니다. 제1차 조직 개편에 비해 개편의 폭이 상당히 넓었으며 그 시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정책과 예산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서 재정경제원을 신설했습니다.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해서 건설교통부를 신설하였고

제1차 개편에서 신설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 산업인 정보통신 사업 추진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습니다. 제2차 조직 개편을 통해 2부가 다시 축소되었고 1부가 승격되어서 정부기구는 2원 13부 5처 15청으로 변화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 관점에 입각해 전격적인 부처 통폐합과 같은 하드웨어적 조직 개편 방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처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제1차 조직 개편을 통해 139명, 제2차 조직 개편을 통해 21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조직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은 작은 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수행된 최초의 정부조직 축소 개편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처 통폐합 및 기능을 조정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경제, 정치, 행정, 국제적인 배경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 외환위기 극복이 강력한 화두로 요구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지요—공동정권, DJP 연합을 여당으로 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력 분점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199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대응과 행정에 대한 전반적 쇄신이, 국제적으로는 세계화 진전에 따른 적극적 통상정책이 요구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구제 금융을 제공한 IMF가 시장주의 개혁을 압박하면서 행정기구 개편의 방향이 시장주의에 바탕을 둔 정부 규모와 기능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 및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정부혁신 비전으로 설정하고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대민 서비스 개선을 통한 봉사하는 정부를 목표로 추구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급박한 사회변화 속에서 총 3회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준비 기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98년 2월 28일에 단행된 제1차 개편, 총 41개 기구 중 13개가 신설될 정도로 변화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최종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간 협상 과정 끝에 상당 부분이 수정됐습니다. 1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는 대통령 취임 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독자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반대해서 말도 안 되는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독자 개정안을 발의해서 같이 심의하면 될 일입니다.

당초 정개위는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기획 및 개혁 기능과 연계하는 안으로서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를 두고 예산기획, 예산편성, 정부개혁을 모두 포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국과 예산실과 정부개혁실을 둔 것이지요. 하지만 공동정부하에서 대통령의 권한 비대가 우려되어 예산편성권이 예산청으로 독립해서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경제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제1차 조직 개편 결과 2원 14부 5처 14청에서 17부 2처 16청의 조직체계로 개편되었

습니다.

제2차 및 3차 조직 개편에서는 제1차 개편의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를 처로 바꾸고 부총리제를 부활시킨 조치가 그 전형적인 예로 거론됩니다. 구체적으로 제2차 조직 개편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서 다시 기획예산처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폐지된 공보처를 국정홍보처로 부활시켰으며 민주통일평화자문회의 사무처—민주평통 사무처지요—부활시켰습니다. 이어서 제3차 조직 개편에서는 부총리제도를 복원시키고 경제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총리까지 2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말기에 18부 4처 16청의 중앙정부 직제를 가졌는데요.

종합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신공공관리 관점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각 부처의 기구 및 기능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차 조직 개편에서 장관의 과도한 통솔범위로 인해서 경제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재정경제원을 세 부처로 개편한 일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총리제도—경제부총리와 통일부총리를 말합니다—를 폐지함으로써 역대 정부 역할을 축소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세 번의 조직 개편은 각각이 목적, 방향, 추진 주체, 절차 등이 모두 상이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제1차 조직 개편은 정치권과 학계의 참여 속에서 비교적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별도로 정개위를 구성해서 그 운영 결과를 반영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개편 결과를 복원한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의 주체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였습니다. 또한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부처별 쟁점을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직 개편 추진기구 간에 절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제3차 조직 개편은 대통령이 주도하였는데요 2000년 1월 신년사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2월 정부기능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2000년 6월 26일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7월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말에서야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의 기능 조정을 활용한 점증적인 조직개편을 한 정부조직 개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에 따른 부정부패, 산업구조의 변화와 민주화 요구의 성장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하는 정부, 분권화된 정부, 투명한 정부’를 정부혁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 이면에서 심화된 양극화와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하기 위해 봉사하는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혁신 목표를 추구하였습니다. 신공공관리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고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 6회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제1차 조직개편은 임기 중 실시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총 42일이 소요됐습니다. 제1차 개편을 통해서 18부 4처 17청으로 조직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고요.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한편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인사집행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대신에 소관 사무에 전자정부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전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던 행정개혁 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업무 이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관련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의 부처 간 기능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제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으로 설치했습니다.

제3차 개편을 통해서 철도청을 폐지했고요. 한국철도공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물론 공기업으로 신설했지요. 또한 건설교통부의 사무에 철도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습니다.

4차 조직개편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근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차 조직개편에서는 여성부에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하여서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고요. 청소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한편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으로 격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기구는 18부 4처 18청으로 최종 정비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모두 정부 출범 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행정개혁전문위원회라고도 하지요—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 개편을 단행한 다른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점증적인 방식의 정부조직 개편을 취했습니다. 중앙정부 조직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의 편제를 큰 변화 없이 유지하면서 개편이 필요할 시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최소화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규모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 및 업무 과정 개선을 통해서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주의에 따른 부처를 통합하고 광역화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은 행정적 측면에서 과거 정부조직 편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혁신은 작은 정부와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줄여서 시장과 지방정부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정 규모의 정부를 지향한 전임 정권과는 달리 작은 정부 및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면서 정부 구성 및 운영에서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능하고 작은 정부, 국민을 섬기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단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설계와 대부처주의를 기조로 부처 통폐합을

통해 총 3회의 조직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

제1차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32일이 소요됐는데요 이는 정부 출범 직전에 완료됐습니다. 해당 조직개편 결과 다수의 거대 부처가 탄생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해서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재정 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금융정책 및 외국환 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 기능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였고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 문화부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수산 부서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해운·해양 부서를 통합하여서 국토해양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산업기술 연구개발 부서 등을 통합해서 지식경제부 등으로 부처 기능이 통합·광역화된 예에 해당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제1차 조직개편 결과 정부조직 체계는 총 11개 기관이 감축돼서 15부 2처 18청으로 개편됐습니다.

제2차 조직개편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였습니다.

제3차 조직개편에서는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 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안전보건 기능도 명기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기구는 총 3회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끝에 15부 2처 18청으로 정부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앞선 정부와 달리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상시적 자문기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 작업을 통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단기간에 마련했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부처의 통폐합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개편이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신공공관리, 작은 정부론의 정부관, 민간기업의 시각 등을 바탕으로 수행된 대규모 개편을 통해 정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특히 제1차 조직개편에 따른 대국·대과 주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11개 감축되고 그 하부기구는 실·국이 55개, 과가 93개, 총 148개,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을 포함해서 총 3427명이 감축됐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박근혜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의 지속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이라는 대통령의 의제가 동인이 되었다는 관측이 존재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목표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도로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조직개편의 방향은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기관별 고유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 안전 등 주요 분야별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시기의 정부혁신은 신공공관리와 전통적 조직관리가 혼합된 특징을 보입니다. 민간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의 관리 역량 향상을 도모했으며 정부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해 전통적인 조직구조 개혁 전략이 동반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총 3회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제1차 조직개편은 2013년 1월 30일에 이한구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 관련 국회 협의가 지연되면서 출범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2013년 3월 22일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튿날 공포·시행됐습니다.

제1차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51일이 소요됐습니다. 제1차 조직개편은 경제부흥, 창조경제, 국민 안전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경제부흥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의 명칭 변경 및 부처 간 기능 조정도 다수 이뤄졌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개편했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로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보좌기구를 체계화했는데요. 국가안보실을 신설했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분리했습니다. 국무총리 보좌기구도 체계화했는데요.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분리했습니다. 특임장관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15부 2처 18청이었던 정부조직은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됐습니다.

제2차 조직개편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체제 개편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재난안전 총괄 부처로서 국민안전처, 장관급으로 신설했습니다. 공직 개혁을 위해서 인사혁신처를 차관급으로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 및 인사 기능이 분리돼서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개칭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신설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으로 변모했습니다.

제3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했습니다. 세 차례의 조직개편 결과를 보면 박근혜정부의 기구는 17부 5처 16청이 되었습니다.

(일부 의원 입장)

어서들 오십시오.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박근혜정부의 첫 개편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의 이전으로 상태를 되돌리는 조치였습니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제2차 조직개편 작업은 비밀리에 진행됐으며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문책성 성격의 조직개편이 전격적으로 단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에 폐지됐던 인사행정 전담기구를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로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했나?」 하는 의원 있음)

별로 안 했습니다.

출범 초 최소한의 개편, 기능 조정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통상의 준비·전환 기간이 없이 긴급하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와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작은 정부와 시장 중심의 신공공관리 관점에 입각했던 앞선 두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부터 진보적 이념을 지향하는 정부혁신을 구상하고 추진했습니다. 국정운영 및 정부혁신의 주도적 이념이자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강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정부의 업무 처리 방식과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의 개선도 병행하는 두 가지 원칙을 뒀습니다.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안은 향후 조직진단과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5회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법 개정은 임기 중에 의결됐습니다. 총 4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청을 격상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한편 이전 정부의 개편 이전의 상태로 정부기구를 복원하려는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서 다시 행정안전부가 출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부활시켰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도 부활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 통상교섭, 재난안전관리 등 차관급 본부장을 신설했습니다. 정부조직은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변화했습니다.

지루하시지요?

지금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죽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개 약 3회에서 5회에 걸쳐서 정부조직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을 처음 추진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상황을 봐 가면서 계속 추진하겠다 싶어서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죽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정 부분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는 제1차 개편에서 처리되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부처 간 기능 재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에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제3차 조직개편에서는요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복수차관 제도를 도입해서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습니다. 위 개편 작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기구는 18부 5처 18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조직개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을 신설했는데요 에너

지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정권 말에 단행된 제5차 개편을 통해서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해서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정부기구는 18부 5처 18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기에 전격적으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대신에 조각을 완료한 이후에 조직개편을 실시한 특징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의 조직개편 빈도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총 5회의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노무현 정부는 총 6회를 실시했는데요, 이 뒤를 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은 최소한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1차 조직개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제외한다면 개편의 주된 내용은 박근혜정부 당시에 개편되었던 조직을 복구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로 행정기관 간 기능 재배분이나 복수차관 신설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 정부 중 별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처 승격 및 청 조직 신설 등 소규모 개편을 했는데요 물론 임기를 3년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국정운영에 불리한 정치구조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했고 정부 출범 이전에 내각 인사를 먼저 내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구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시에 정부 혁신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우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달리 효율성 강조, 위원회 정비 등 비대하지 않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공공관리적 요소가 두드러진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조직개편은, 그래도 많이 했네요. 총 4회 실시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국회에 발의한 제1차 조직개편안, 당시에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위원장의 위원회 대안의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51일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아마 문민정부 이후 제1차 조직개편 소요기간 중에는 최장 기간이었다고는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기구는 18부 4처 18청에서 19부 3처 19청 체제로 변모했습니다.

2차 개편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부처 간 기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3차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했고요. 제4차 개편에서는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말의 정부조직 구성은 19부 3처 20청 체제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에 부처 승격 및 일부 청 조직의 신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전 정부의 중앙행정조직을 유지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단행되는 제1차 조직개편의 폭이 상당한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편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선조각, 후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조직, 사람, 정책의 순으로 전격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초점을 뒀다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조직개편을 위한 입법 논의의 부담으로 사람, 정책, 조직 순으로 정부를 구성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의 정권별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신공공관리 관점에 입각해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조직 축소 개편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러한 신공공관리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부기구를 축소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앞선 정권들과 달리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은 점증적인 방식을 취했습니다. 대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부처 간 기능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큰 정부로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신공공관리, 작은 정부론, 민간의 경영기법 등을 바탕으로 대규모 부처 통폐합을 통해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차 조직개편에서부터 폭이 상당했는데요, 그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앞선 정권의 부처 통폐합 이전의 상태로 정부기구를 되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대신에 선조각 후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1차 조직개편은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의 중앙행정조직 구조를 유지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 개편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 151일, 박근혜 정부 51일, 노무현 정부 42일, 문재인 정부 41일, 이명박 정부 32일, 김대중 정부 13일, 김영삼 정부는 10일이 1차 조직 개편에 소요됐습니다.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논의를 보면은요, 제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57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게 지금 7월 기준이니까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중 절반이 부·처·청 단위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내용을 수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 관련한 주요 논의는 크게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또는 폐지, 부처 간 기능의 재조정, 정책 조정을 위한 부총리제도의 활용, 대통령실 직제 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또는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드웨어 위주의 개편입니다. 기재부의 경제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개편에 대한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 여성가족부의 개편 유무를 두고서도 관심이 계속 있었지요. 이

는 처·청 단위에서는 통계청을 통계관리처로 격상하고 청년처·이민처를 신설하라는 주장, 노동 관련해서는 근로감독청이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라는 주장, 마약수사청·농지관리청·관광진흥청·돌봄청을 신설하라는 주장 등이 제22대 국회에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둘째로는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부처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의 조직개편 논의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기획재정부 개편 논의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구 전담 부처의 제안의 경우도 부처 간 기능의 조정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서 제가 제기한,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의 제안들이 향후에 추진될 수도 있는 2차·3차·4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면밀한 평가와 반영을 통해서 향후의 정부조직도 계속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 개정을 통해서 소관 부처의 일부 기능을 확대하라는 제안도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서 해당 부처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게 한, 아쉽게도 이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요.

다른 예로 보면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도 있는데요.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개편 공약 일부를 현실화했지요. 그래서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경청통합수석 내 공공갈등비서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국정운영 방식의 하나입니다. 주지할 점은 정부조직개편은 정책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기획의 합리성이 국회의 입법 과정이라는 정치의 영역을 거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의 역사는 당선인의 정책공약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고 때로는 여야 간 합의 과정에서 좌초되기도 했음을 보여 줍니다. 더욱이 역대 정부의 경험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단행되는 조직개편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음을 시사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따라오는 후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조직개편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조치를 실현함으로써 정부 구조를 개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 고려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기관 신설이나 부처 간의 사무 배분 등은 근본적으로 행정조직법의 구성원리에 부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조직 관련 법령 체계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정이 행정각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어떻

게 효과적으로 통제 및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개혁 또는 정부혁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에 도구적인 차원에서 정부조직개편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은 행정개혁을 위한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는 부처 신설이나 기능 재조정 등 조직개편의 당위성이 정부혁신의 주도적 목표에 부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는 국정수행과 관리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행정개혁의 궁극적 목적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할지라도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일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의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정치적 진통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가 공직사회의 혼란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 초의 정부조직개편은 광범위한 개편보다는 행정개혁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행정수요 대응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조직개편은 정부혁신과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신문의 사설이 있습니다. 이 사설 한 편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지난주에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했습니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표결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대선이 치러진 지 4개월 만에 정부가 새 조직 체계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게 9월 28일 전자신문 사설입니다.

여론의 관심은 검찰청 폐지와 같은 정치적 의제에 쏠려 있는 듯하지만 새 정부 조직은 지금까지와는 대비되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입니다.

큰 줄기로만 봐도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기획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던 에너지정책 업무는 원자력 발전, 수출만 빼고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됩니다.

일단 국가재정과 예산권을 통으로 틀어쥔 기획재정부의 업무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각기 재정과 예산 분야 정책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 선택은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효율과 집행력이 항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 앞으로도 지켜볼 일입니다.

전자신문의 사설입니다.

또 하나 중대한 도전은 이미 전문가는 물론 각계에서 나온 우려처럼 환경과 에너지라는 상충된 정책 수단이 한 바구니에 담기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환경과 에너지가 어느 한쪽에 흡수되어도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생활 구현을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분야라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고 집권 뒤에도 의중이 가장 크게 실린 부분이라 더 이상 조정 여지도 없습니다. 이제는 옳든 그르든 가야 할 길이 됐습니다. 의견 단계 실패는 바뀌면 되고 정책 실패도 만회하면 되지만 부처 실패는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됩니다.

새 정부 조직도 대통령 인사권 안에 있습니다. 실무자까지 전부는 아닐지라도 장관이

업무를 장악해서 조직개편의 목적과 방향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결정적 힘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명운이 걸린 일들은 그것대로 추진해 가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산업의 행정 문제 역시 그보다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첫 단추로 맞춰진 정부조직이 정부 요구대로 정해진 만큼 이제 그것이 잘 돌아가고 필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책임 또한 정부 몫이 됐습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결정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뀐 역할과 달라진 위상의 부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 왼쪽을 보면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대체 이런 필리버스터를 왜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한 말이지만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부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방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퇴 결의안이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계시는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며칠 동안 맞교대를 하면서 내일 또 해야 되시잖아요.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8시간씩, 6시간씩 또 이제는 4시간씩 이렇게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하자는 필리버스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느닷없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의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필리버스터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왜 국민의힘 의원이 안 왔다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됩니까?

24시간이 지나고 종결동의안 제출하기까지의 3분의 2 규정 이거 바꿔야 됩니다. 150명 채우면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기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 시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이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쟁점 법안, 이번에 60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이제 끝내도 됩니까?

그러면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지시에 따라」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께서 아직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의장 우원식 조금 더 해야 돼요. 24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다음 주자로 바꾸든지.

○안태준 의원 아닙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신속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딱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준 의원님,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정리 좀 해 주세요, 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 많이 안 계실 때 필리버스터의 문제점, 필리버스터의 기원과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점, 그래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법에나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는 명확히 불합리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법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법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마무리발언을 행복하게 하면서 천천히 끝내 보겠습니다.

의장님이 끝내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나요?

(「당연하지요.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아까 김남근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무례한 기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영어의 기원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이게 네덜란드 말입니다. 이것 제가 제대로 잘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바이터(vrijbuiter)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 약탈자에서 유래했다 그러고요. 스페인어로는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 필리부스테로 등을 거쳐서 영어에서 정치적 의사진행 방해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는……

(「불어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불어요? 이것은 스페인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

즉 원래는 해적, 약탈자 같은 의미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소수파의 전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상원 등의 발언시간에 제한 없던 구조에서 소수파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다수당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예컨대 클로저, 그러니까 24시간 도입 이전에는 발언 제한도 거의 없었답니다.

○의장 우원식 안태준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 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개편안의 취지와 쟁점, 기대 효과와 위험 요인 그리고 필요한 보완책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그리고 국회 앞에 이 조직개편의 본질적 의미와 시급성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여러 쟁점들, 기재부 분리,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확대,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 새

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더 이상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토론 과정에 지적된 여러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정부조직 개편은 처음에는 혼란을 동반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국정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 또한 철저한 보완 장치와 국회의 견제를 병행한다면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세우기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필리버스터만 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견제와 보완을 통해 개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조속히 그러나 치밀하게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국민을 외면한 정쟁 투쟁을 그만두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19시40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김문수 의원, 노종면 의원, 문금주 의원, 이강일 의원, 이기헌 의원, 백선희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42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20시01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2표 중 가 180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8)

(20시10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7)

(20시11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문진석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문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허영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의원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해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사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동기한 종료 위원회에 고발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은혜)

(20시18분)

○의장 우원식 먼저 김은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자리라도 지키든가요」 하는 의원 있음)

(「일하지 않은 자 월급 받지 마라」 하는 의원 있음)

○김은혜 의원 시작할까요.

○의장 우원식 조용히 해 주세요. 토론 들읍시다.

○김은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증감법은 위헌적인 악법입니다.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게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 원안은 부칙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헌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이처럼 위헌적 입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 원안은 입법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보복입니다.

○의장 우원식 김은혜 의원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20시 19분에 문진석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의원 즉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 버리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분노를 위해 법을 만들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법을 폐지해 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께서 위임한 입법권을 이처럼 사사롭게 남용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특권계급입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갈아 치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계급인 것입니다.

권력이 법치를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국회증감법은 이 특권의 명백한 사례입니다. 증감법 제15조의2 3항 원안입니다.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게다가 제4항에서는 국회가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에 개입하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시킨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증감법은 국회의 다수당이 검찰 놀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청을 뽑아내서 여의도에 심어 놓은 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입니다. 입법부가 사법의 권한까지 가져간다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삼권을 서열화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고 서열화시키는 것이 특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감법 원안의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간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 본문, 즉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해 놨습니다. 즉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 뒀던 겁니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한 위헌적인 입법입니다. 이 같은 위헌적 소급입법을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소급입법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소급입법이 반복되어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병폐를 입법부의 손으로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운영위 소위에 상정된 9월 2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9월 24일, 법사위 상정 및 통과가 된 당일에도 이 같은 소급입법의 폐해를 이야기하며 반드시 삭제되고 위헌적 입법안은 폐지돼야 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묵살됐습니다.

진정소급효 삭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문제는 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토론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전에 기습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승인과 징계요구권 그 부분까지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당초에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더니 개악을 한 겁니다. 좀 고쳐 보겠다더니 오히려 더 해괴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사위원회에 추미애 검찰청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의장님 송구합니다만 우원식 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높은 거군요. 민주당 안에서는 선출 권력에도 서열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마저 민주당이 원하면 누구든지 골라서 고발할 수 있도록 개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증감법이 얼마나 위헌적인 악법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론이 따가워지자 그제서야 놀라서 부랴부랴 허겁지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지요.

무엇보다 증감법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왜곡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무더기로 증인을 불러 놓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은 다음에 선택적으로 위증죄를 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소급적용 금지라는 헌법의 한계까지 무시했듯이 제멋대로 살생부를 만들어서 정치적 탄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라는 인민재판이 더 노골적으로, 더 잔혹하게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법사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 주는 예고편입니다. 민주당은 동거녀를 흉기로 폭행한 전과 9범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이미 허위 스캔들, 허위 사실로 드러난 소위 연어파티 스캔들을 두고서는 멀쩡한 검사와 수사관을 불러내 거짓을 사실로 바꿔치기하라며 겁박하고 집단 린치를 했습니다. 이처럼 전과 9범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면 의인이고 성실한 검사라도 민주당을 거역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이 중의 단 한 명이라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부터 민주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조리 증인으로 끌어내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나 보자라는 심산으로 부모, 자식까지 털어 댈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티끌이라도 찾아내면 그 다음에는 권력에 줄 선 사정기관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

법은 정의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증감법이라는 그릇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명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PPT 자료를 현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료 번호는 11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증감법이라는 그릇에는 오직 복수와 증오 그리고 협박만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는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단 한 줌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사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 신군부가 야당과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만들었던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의 제1조는 '정치적·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도의정치를 구현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 그 대상자를 '1979년 3월 12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상자로 국회의원, 정당의 당직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김영삼·김대중 등 당시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치인을 탄압하는 악법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국회증감법과 신군부의 일명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어기고 태어난 위헌적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법이 닮았다는 것은 두 법을 만든 집단이 서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젊은 시절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군부를 닮아갑니다. 김대중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전두환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젊은 시절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던졌던 그 많은 짱돌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이곳에 임석해야 할 국무위원이 자리에 부재합니다. 저는……

지금 전화 중이신가요, 의장님?

현재 필리버스터에 임석해야 할 국무위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바 조속히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잠정 중단하고, 부재의 이유와 그리고 부재의 상황이 사전에 원내지도부에게 혹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이 자리에 임석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중단토록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우원식 여기 국무위원이 없는 이유는 이 법 소관이 어느 국무위원에 속해 있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도 소관 부처가 있지 않나요?」 하는 의원 있음)

이 법은 국회 거니까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이나 여기 앉아 있으면 됩니다. 사무총장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국회 겁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법이 아닙니다.

계속하시지요.

○김은혜 의원 예.

소관이 정해지지 않은 법안,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엉성하게 얼마나 대충 만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모 위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은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 버젓이 거짓말하고 책임을 안 지는 길을 여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민주당은 말과 삶이 모순됩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투기꾼이며 성추행을 두둔하는 페미니스트이자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낸 반미주의자이며 일본산 제품을 애용하는 반일선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외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물 마시듯 거짓말을 해 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당 소속입니까?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생태탕 거짓말, 후쿠시마 핵폐수, 청담동 가짜뉴스, 최근 AI를 이용했는지 음성 변조했는지 아직도 밝히지 못하는 지라시 수준의 의혹 제기까지, 도대체 어느 정당에서 나왔던 거짓말입니까?

직업적 음모론자이자 가짜뉴스 유포자인 김어준에게 찾아가 허구한 날 머리를 조아리며 이번에 출마했다고, 이번에 당선됐다고 하면서 비루하기 짝이 없는 문안 인사를 올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당입니까?

최근에는 지라시 수준의 잡설을 국회 회의장 안에 들고 와서 대법원장을 쫓아내야 한다며 헌정을 유린하고 지라시 남매, 가짜뉴스를 퍼트린 의원들을 엄호하고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폐수로 선동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 뻥긋 못한 채 침묵했던 분들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국회 안에서는 진실해야 한다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의 거짓말은 예외라는 것입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거짓말까지 특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만함과 특권의식에 깊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거짓말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 감정법은 입법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집단이 위헌으로 점철된 법을 정치적 복수심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를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7명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법안의 위헌성을, 이 법안의 위법성을, 이 법안이 악법임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해 주실 의원분들이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법은 헌정사에 부끄러움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당초 원안의 위헌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 4항 부칙 2조, 소급입법의 위헌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국회 증감법상으로는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종료 후에는 관련자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 본문, 즉 위증죄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라고 함으로써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의 증인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위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삼권분립 위반의 위헌성입니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15조2의 3항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이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수사행위에 국회가 관여하게 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제4항의 징계요구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에 반합니다. 당초 원안은 사실상 국회의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도록 했지요. 의장님이 우리 국회 내에서 검찰총장이 되실 뻔했습니다. 다만 그 바통을 이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 의전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명시된 사법권 침해 그리고 사법권 점령이 추미애 의원의 손에 넘겨진 거지요. 각각 원내 교섭단체에서 지정해야 되는 간사마저도 임명하지 못하게 한 채 한 손을 묶고 또 한 손을 묶으면서 이제는 입법 폭력까지 주도적으로 자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징계는 검사에 대한 징계, 국회의장이든 위원회든 징계요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토론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인을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해 보지요.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수사 완료를 하지 못하면 검사를 징계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수사를 2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압박하는 것이지요. 법안이 당초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위증 사실이라며 처벌을 가능하게 했던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진정소급효는 위헌이라면서 민주당 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위원의 발언을, 토론이 제대로 허용되지 못했던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감정법, 국민의힘 위원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대충 서면 보고받고 대충 형식적으로 끝나는 이 조항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 요소가 있는 진정소급효를 허용함으로써 전례 없는 위헌적 법률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은, 원문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꾸 소급입법 얘기를 하시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으로 해서 과거에 처벌받지 않게 됐던 것들을 처벌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민주당 위원의 발언입니다—과거에도 실체적으로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공백이 있었던 것들을 그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정안에서 공백을 다시 생기게 하셨나요?

민주당 위원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과거에는 처벌받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진정소급입법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칙 15조 2항은 왜 삭제하셨습니까? 소급입법 적용이 되는 부칙을 이번에 삭제하셨지요?

민주당 위원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저는 진정소급입법 얘기를 자꾸 야당 위원님들이 거론하시면서 마치 진정소급효에 따른 위헌인 양 문제를 얘기하셔서 이것은 그런 사안은 아니다, 위헌 소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좀 말씀드립니다—제 이름도 나오네요—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제 소회의에서 다 논의를 했습니다—소위원회지요—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방식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 사전 논의를 하고 그 정리된 것들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는 여야 사전 협의,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왜 갑자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의사봉을 쥐어 준 걸까요?

민주당 위원의 발언입니다. '사전에 서로 협의된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조치를 결의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절차상에서는 혼란은 없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어제 소위원회에서 다 논의됐던 것들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니 소위원회 논의를 존중해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 소위원회 논의가 소급입법 허용이었지요.

속절없이 방망이는 두들겨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추가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가 국회의장에게 그리고 국회에게 본회의 의결로 수사기간의 연장 그리고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그 같은 권한을 누가 감히 국회에 주어서 사법권을 점령하게 했는지, 준사법기관으로서 지휘하게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의 답변을 대신 소개합니다. '본회의에서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있어서도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에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데, 위임규정이 마련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위임규정은 토론을 종결한 이후에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을 통해서 쓱싹 법사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에게 모든 전권을 허락해 주었지요.

법사위원회에 그다음 날, 속도감 있게 9월 24일에 올라갑니다. 법사위에 상정이 됐을 때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입니다. '분명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 나쁜 범죄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사후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처벌하게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반대의견을 표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곽규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그 고발 대상이 원래는 고발할 수 없었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증감법을 만들어서 사후에 고발을 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절차에 관한 법도 그 절차가 형사처벌에 미칠 수 있는 것이면 당연히 헌법상의 형법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입니다.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우리 국회의 구조상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에서 고발을 논의해서, 협의해서 합의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나'.

수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바 과반의 의결로 고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국민의힘 위원의 입장이 관철되기는, 가능성은 제로지요.

곽규택 위원의 발언입니다.

'고발을 한 이후에 2개월 정도 수사가 종료가 안 되면 그 수사기관이 국회에 또 와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하면 또한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두 달이지요—국회에서 수사기관의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의 발언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산하에 혹은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수사 지휘뿐만 아니라 징계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외쳤습니다. '법사위원님들, 이런 것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리고 그 특정인을 처벌하고 싶은 그런 심정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회가 수사기관 불러다가 2개월 안에 조사 마치자는 이유가 뭡니까?', 이에 대한 답은 법사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보고받고 그 담당자를 징계하고 이런 법이 들어 있는 것 그것을 또 운영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고 이제 법사위에서 표결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곽 위원의 발언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법사위원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계시는 분들, 계셨던 분들, 나오실 분들, 나온 분들 철저하게 다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관련자에게 보고를 받고 지휘하고 징계한다? 말이 안 되는 법,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 법사위에서 무사통과가 됐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고발인의 신분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

리 다른 법체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원칙과 목적, 내용에서 그리고 수단에서 함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 또한 정면으로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민주당의 김남근 위원은 소위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알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법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원칙과 상식에 위배되는지, 또 역사에 진정소급효를 인정했을 법한 이 비극을 앞두고 갑자기 부랴부랴 더 센 악법으로 개정이 됐으나 후대에 남겨 줄 수 없는 이 법이 왜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김남근 위원의 발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증감법 제15조 5항에는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안에 따르면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본회의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먼저 전해 드리자면 만약에 국조특위처럼 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이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지요—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또 소속기관의 장은 이곳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수사기관을 불러들여서 보고를 받고 또 징계를 요구하는 흡사 내란전담재판부를 본회의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또는 전담 검찰청을 법사위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을 놀랍게도 민주당 위원님이 지난 23일 운영소위에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남근 위원께서는 지난 운영소위에서 '수사기관이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더더군다나 본회의장 안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가려 토론을 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보고와 징계는 형식적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증감법 제15조 4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일축을 하셨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15조 4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중간보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즉 두 달을 넘겨 수사 중이거나—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기간이란 위원회의 기간이며 수사는 두 달의 수사기간이 한계입니다—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의 본회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대체가 된 수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위원회는 증언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위원회입니다. 이 역시 활동기한이 종료되면 사라지게 될 존재입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수사기관의 보고, 징계 요구 등의 과정이 매우 미흡하게 진행된 채로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

회에서 고발해야 된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 그것을 어떠한 권리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을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의장과 민주당의 입맛, 이제는 추미애 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횡포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법과 체계에서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은 이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비슷한 정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16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류 등의 사유로, 종료지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조치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법체계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법체계 간에 동일성 원칙이 그리고 비례의 원칙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짜고짜 이제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처럼 여겨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모든 전권을 다 주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사법기관 점령 축하드립니다.

어떤 상임위로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해서 그 당시 원안은 최소한의 협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증감법은 부실 입법, 무책임 입법, 아마추어 입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과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증인일수록 더더욱 그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위증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위증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식과 원칙이 의외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진술인의 방어권 또한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법은, 이번에 민주당이 상정시킨 증감법은 정치적인 통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법안과 유사합니다.

미국은 입법부인 의회가 강력한 조사권을 갖는 나라입니다. 청문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선서하에 이루어지는 공적 진술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장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질서 보호 그리고 국정 신뢰의 유지입니다.

미국 연방법을 한번 봤습니다.

제18편에는 두 가지 핵심 조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1621조입니다. 이는 퍼저리(perjury), 위증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적 선서를 마친 후에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

라 선서한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된 진술을 할 경우에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1001조는 거짓 진술에 관한 규정입니다. 폴스 스테이트먼트(false statement)입니다.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정부 또는 의회의 기능을 방해하기 위한 허위 진술, 문서 조작, 사실 은폐 등을 포괄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연방기관 또는 의회 조사 과정에서 문서로 제출된 진술이 허위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8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증 또는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정헌법 5조입니다. 자기부죄거부권이라고 하지요. 영어로 하면 더 라이트 어게인스트 셀프 인크리머네이션(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입니다.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회에 출석한 증인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나는 수정헌법 제5조를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위증죄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진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즉 증인은 답변을 강요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침묵을 선택할 자유를 가집니다. 만일 이러한 권리가 무시된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 또한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술 면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여와 야, 보수·진보, 좌와 우를 떠나서 정권의 부침에 국회가 흔들리지 않고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서 진술 면책 등 증인의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지켜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경우 증인은 수정헌법 제5조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으나 그 대신 진술 내용은 형사소추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면책을 받은 이후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의회의 진실 규명을 위한 강력한 위증죄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술인의 헌법적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는 이중적 구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권과 시민의 자유권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고 헌법적 질서 속에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역시 국회에서의 진술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강화를 논의할 때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술의 법적 구속력, 증인의 권리보장 그리고 적법절차의 정착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논의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의 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할 겁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해 보면서 깜짝 놀랐던 중국에서의 위증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일간 비슷하게 전철을 밟을까 우려하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입법기관은 전인민대표대회, 즉 많이 들으셨던 전인대입니다. 그 상설 기구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존재합니다. 입법·사법·행정 각 권력은 당의 지도하에 일원화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에 서열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의회 내에서의 위증, 즉 고의적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처벌은 존재하지만 그 적용 범위와 실효성은 서방국가들과는 크게 다릅니다. 또한 진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제도적 장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선 중국 형법 제307조를 보겠습니다.

중국 형법 307조는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형사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에서 증인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형량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 중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법절차에서의 증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입법기관 내에서의 진술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위증죄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처럼 선서하에 증언하고 위증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제도가 중국의 입법기관에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이는 중국의 의회가 정치적인 심의기관이 아닌 형식적인 통과의례의 절차적 통과 기관으로 작동함을 반영합니다. 위증죄의 적용 자체가 법률상보다는 정치적 통제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진술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중국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에는 당연히 없겠지요.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또 법으로 보장한 자기부죄거부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명시적인 제5조 이퀴벌런트(equivalent), 즉 묵비권의 보장은 불완전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부죄거부권을 연방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어떻게 들리십니까? 진술하라고 그 의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118조에서는 피의자나 증인이 신문 과정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나 묵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사 및 청문 절차에서의 진술은 강압, 고문, 협박 등 불법적 방식으로 확보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국제사회 그리고 인권단체는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일부 법학자들이 이러한 절차의 헌법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의 진술 역시 독립적인 진실 규명 기능보다는 정치적인 정당화 또는 기존 결론에 대한 지지 명분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조작이 문제가 되더라도 공식적인 위증죄 적용보다는 당내 징계나 정치적 책임 추궁의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량보다 더 큰 정치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질타를 받으면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중국의 위증죄 제도는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실질적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의회 내 진술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합니다.

동시에 진술인의 권리 보장은 헌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으며 제도적 장치 또한 아주 부족합니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계 속에서 국가기관의 진실성보다는 정치적 일체성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법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되며 법의 지배와 권력의 통제를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위증의 처벌뿐 아니라 진술인의 권리 보장 그리고 적법절차의 실질화가 병행돼야 함을 시사합니다.

권위주의 체계에서 나타나는 법의 도구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입법 시스템이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균형 위에 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증감법이 얼마나 우리 국회 내에서 사법권 점령, 준사법기관 같은 역할을 행사하려 했는지 프랑스와 터키의 예를 잠시 뒤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렇게 갑자기 무리한 법을 밀어붙이는 걸까. 사실은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고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작동 원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발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문서가 뭡니까?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위반하면서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한다면 모순이지요.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파가 혹은 정당이 국민의 뜻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세계의 민주국가에서 지켜져 온 민주주의의 기둥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그리고 상호 견제입니다.

헌법이 특별히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것은 이 선출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깨고 독주한다면 부디 사법과 법치만이 독립을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것은 국민이 입법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고치시고 제정을 하면서 청문회를 열지요. 그러나 국민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국회 아래에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강요하는 권한은 그 어떤 국민도 부여해 준 바가 없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입니다.

지난해부터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국회는 널을 뛰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행위 조항을 삭제하면서 당선된 대통령의 면소를 시도하거나 대법원장을 흔들어서 청문회에 세우고 그 시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탄핵과 대법원장에 대한 가짜 뉴스로 입법부를 물들인 것이 민주당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왜 면소 법안이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 대상 법안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수정안으로 부랴부랴 변경돼 상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들께서 깨어나서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재판 중지법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백현동, 대장동, 대북 송금 재판까지 관련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면이 안 된 것을 보니까 공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려우면 뭘 하겠습니까? 사법부를 흔들겠지요. 이 관련자들을 다 무죄 만들어 주려면 앞으로 지난한 시간이 흐르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이 기간을 틈타서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재판 중지는 못 시키니까 무죄를 해 주려고 하면 당연히 조희대 대법관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대법관을 몇 명으로 구성할지, 30명으로 했다가 또 100명으로 했다가 100명은 차마 면구하고 법체계상의 자구도 모두가 다 엉터리니까 30명으로 대략 절충을 해서 법원행정처마저 극구 손을 내저었던 그 법안까지 민주당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마저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일단 통과는 시켜 놓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보겠다는 건가요?

국가를 세우고 국가의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면 됩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대통령이라 칭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면직 조항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위헌 여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메시지가 아니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우리에게 너무 낯익은 민주당의 그동안의 전범이었지요. 법원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면 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법원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장 사퇴하라고 하고 있지요. 이제는 법으로써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여러 시도가 더 이어질 것입니다.

정당한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사위의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위원들이 못다 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대신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대법관 증원, 즉 법원조직법안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또 한 번 대법관을 불러들이는 청문회,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5월 14일이면 대법원에서 백현동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던 날의 2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박준태 위원이 그날 못다 했던 발언을 전해 드릴까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입니다. 그러면 왜 상상도 못 하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일어나느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의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느냐?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미 전과가 여러 개 있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 국회를 망치더니 이제는 나라 전체를 그냥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박준태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의 발언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한 의원은, 지금은 장관이시지요, 사법부의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법부 위에 올라선 입법부의 폭력을 잠시 뒤에 여러 사례별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참고 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말을 거듭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하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을 존중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합니다.

박준태 위원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이 발언은 한마디로 사법부를 이재명 발아래 무릎꿇리겠다는 의도이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 재판까지 연기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당시에는 후보고 지금은 대통령이지요—와 김혜경 여사,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 존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대법원 증원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키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적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품격 있는 소신과 비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너무나 유사하게 가고 있는 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이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의 발언을 지속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때—2004년입니다—대법관이 20명이었는데 32명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14명에서 30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했을까요? 물론 12명 늘리면서 전부 다 자기편으로 채워 놨습니다. 그래서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에서 4만 5000건 판결을 했는데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이 중 얼마였을까요? 1건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같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고 대법관 늘리는 법을 발의했는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화된 제도를 다 갖추고 있는데 후진국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법·사법·행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은 우리가 중진국에 있을 때 아마 출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선진국 때 태어나서 이제 후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안겨 줘야 하겠습니까? 베네수엘라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꼭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심제에 대한 우려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 체계를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4심제 이야기도 잠시 뒤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면 나눠 보면 2년간 한 8명씩 증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법안에는 100명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년간 1년에 28~29명 증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 달에 두세 명씩 대법관을 새로 지명하고 또 늘려야 되고 또 28명, 29명 인사청문회 하고, 하다가 날이 새지요. 기괴할 뿐만 아니라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의 품격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이 30명으로 다시 그나마 줄여 놓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 체계하에서 대법관을 임기 6년, 대통령은 임기 5년, 우리 국회의원은 임기 4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입법·사법·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국민들께 민주주의를 유지하라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자 소명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의 입장을 대신해서 이같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 증원 법안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결국에는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해화,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령해석 통일 기능까지 마비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마비될 수 있는 거지요.

또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영국과 미국은 우리보다 더 적은 대법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도 예를 들 수 있지요. 대법관 수를 떠나 구성을 보면 부장 법관과 기타 법관 이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에게 일이 많으니 n분의 1로 하자라는 식의 허술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논의로서는 오히려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소위와 전체회의에서의 작은 조항 하나가, 던진 작은 돌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날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소위를 전격적으로 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을 하시게 해 드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취임식 다음 날이 아닌 바로 취임식 날 벌어졌던 법사위의 법안소위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사자후처럼 법원행정처에서 민주당 위원들에게 절규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형원 차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거 대법관 증원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상고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과 함께 논의가 되었고 사법개혁, 즉 사법제도개혁위원회 등 범국가적 기구를 설치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런 과정이 없이 단기간에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헌법상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상고사건 적체 문제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법원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다루는 구조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상고심사제 도입 등 구조적인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급심의 권한 강화 그리고 충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기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던 것도 그것이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법령 해석의 통일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중대한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예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법관 수가 대폭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원합의체 심리가 곤란해지고 3~4인으로 구성된 소부 위주로 상고심 재판이 운영될 수밖에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소부를 구성하는 소수의 대법관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대법원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한 법령해석 통일 기능의 약화로 하급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뿐 아니라 당사자의 재판 승복률이 낮아지고 상고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고 소송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대법관 대폭 증원을 정당화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바 있지요. 해외 사례를 말입니다. 이는 잘못된 비교라 할 수 있다. 두 나라의 최고법원은 재판 구조, 상고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두 나라 최고법원의 재판부는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차등을 두어서 재판장과 그 외 법관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전원합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법관이 한정되며 전원합의체는 매우 예외적으로 운영된다. 더구나 독일의 경우 법관이 2만 명, 변호사는 16만 50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너무 비교가 되네요. 법조 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를 뿐만 아니라 오랜 법률 문화와 제도적 축적을 통해서 법령 해석에 일관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두 나라는 최고법원의 다수의 법관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고허가제 등 상고사건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외국의 사법시스템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법체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날 소위가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법안소위에 있어 봤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작심하고 이야기한 사안은 이례적으로 처음 봅니다.

배형원 차장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부칙은 2년 내에 16명 또는 3년 내에 86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나중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신 다음에 30명으로 줄였지만 그 당시에는 100명의 이 법안이 올라가 있었지요—이처럼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 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논란은 임명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재판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국가적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한 수단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 해법은 아닙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반드시 상고심 구조 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순서 또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먼저 확정된 이후에 대법관 수의 적정한 증원 규모 또 시기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대법관 수만 대폭 늘리는 개정안은 상고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대법원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배형원 차장은 이 말을 마무리로 전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먼저 거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였습니다.

이 뒤에 많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위원님들이 소위 뒤에 논의를 거친 다음 법안은 이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또는 소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의 위증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위증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넘어간 적이 적지 않았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회에서의 위증이 있었습니다. 백현동입니다.

저는 성남 분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백현동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때에도 백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던 그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날 저도 당시 이재명 지사와 함께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동료 위원님들의 일부는 원내지도부에서 또 일부는 지금도 선수를 거듭하며 이번 22대 국회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백현동에 대해서는 당시에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백현동은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성남시는 식품연구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매각해 달라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 왔을 때 반려를 했습니다. 2014년 8월 그리고 2차 반려는 2014년 12월입니다. 국토부의 요청이 먹혔을 것이라면 진작 먹혔을 것입니다. 한동안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자리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 본부장 또는 2년간 지역구 위원장으로 이재명 측근으로 불렸던 김인섭 씨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은—역임을 했었군요—한국하우징기술이라는 부동산회사를 2015년 1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성남시가 꼼짝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부동산회사를 설립한 다음 날 주거가 가능하다고 주거 용도가 될 수 있다고 용도변경 답변 의견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김인섭 씨는 대법원에 의해서 나중에 징역 5년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징역형을 살고 있던 때는 이유를 알아 보니까 백현동 부동산개발업자, 그러니까 한국하우징기술과 손을 잡고 있는 백현동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업자에게 ‘사실은 내가 대주주다’라고 소송을 벌여서 수십억 받는 것으로 화해결정이 내려졌지만 급작스러운 용도변경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 아니면 안 되는 인허가였다라는 말들이 파다했었지요.

이 백현동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대법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결 하나 때문에 지금의 사법체계가 붕괴되고 그리고 이미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하지 말아야 할 행위자들을 소환하고 수정안으로 바꾸기는 했으나 여전히 입법부가 수사기관의 장인 양 기간을 연장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준사법기관을 대체하는 검찰청 역할을 하게 되는 해프닝이,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특별재판부, 전담재판소, 말을 바꿔서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볼썽사나운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2021년 가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무렵을 전후해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주요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년 10월 19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 역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의혹 중에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있었다. 그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줘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다음 날 저희 국토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벌어졌었지요. 그 당시에 기관증인으로 이재명 지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모 위원이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백현동 개발 관련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는 제목의 패널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조작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위를 다시 읽어 드립니다.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이 의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에게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위 질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모두발언, 설명발언 그리고 뒤의 정리발언을 하나의 답변으로 이어서 발언하였다.

여기서, 원심에서는 백현동 발언의 의미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라고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의견 표명이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된 겁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거지요.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백현동 발언의 의미 확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미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조합하여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것이냐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하나의 연결된 발언으로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가 제시한 패널과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맞다,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서두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그 근거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라는 점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어진 발언에서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구체적인 조문인 이 사건의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 사건 의무조항인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 기재된 이 사건 패널을 시각자료로 준비하여 제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피고인은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즉 피고인은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 전체를 통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고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고인의 이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안 되니까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음, 라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법률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유일하고 다른 법률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말한 법률은 곧 이 사건 의무조항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시각자료인 이 사건 의무조항이 기재된 패널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피고인의 발언입니다—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피고인이 말하였다. 즉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가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강제력이 따르는 요구였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 말은 곧 뒤에 이어진—피고인의 발언을 인용합니다—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말과 합쳐져서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 전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강제된 것이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3번 PPT를 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이 국토부 그리고 성남시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입안 제안받은 내용이 상위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를 거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

2. 국토부가 성남시의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이제부터 PPT에 현출된 그 문서를 재판부에서 인용을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한 데 대해……

왼쪽에 혁신도시법에 의한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오른쪽에 현출된 공문대로 재판부의 판결이 이어집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은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다라고 밝힙니다. 즉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힙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주요한 부분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입니다. 이 각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의 법리 오해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대한 압박과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토론을 할 때 매번 이것이 의견이라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관한 제정과 개정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을 때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이 원하는 상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의무 또한 함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공직자의 선거에서는 공직자 스스로 더 엄격한 원칙을 본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허위의 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세부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

장된 표현에 불과한지는 그 사실이 후보의 공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힙니다. 결국 이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임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동안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재판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증언을 했지요. 위증은 중요합니다. 밑의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할 때 윗사람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라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권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 하지요.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모두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오른쪽에서 보시는 현출된 저희 의원실이 받은 공문대로 기존 협조요청 공문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이후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 제안을 받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식품연구원의 제2차 입안 제안과 제3차 입안 제안의 내용 사이에 유의미하게 달라진 부분은 연구개발용지 비율 상향 등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를 조성하기로 한 성남시의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힙니다. 보셨던 2014년 12월 9일 국토부가 성남시에 회신한 내용과 같은 입장은 그 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재판부는 밝힙니다.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상위 계획 부합 여부, 성남시 공공기여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공표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해서 피고인은 성남시장인 자신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 제기됐던 특혜 의혹 및 이에 결부된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이라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그러나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전에 저는 왜 오늘 상정된 증감법에 연결이 되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검찰 공소장에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발언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회 차원 고발을 제기합니다. 바로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졌던 그 발언이 위증에 해당되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하는 것이 증언·감정의 취지에 부합되며 증언·감정법상에 부여된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필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당시에 발언을 하셨던 분들과 이야기한 끝에 소위에서의 발언을 함께 공개를 합니다. 서범수 위원입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에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 민주당 모 위원께서 당시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백현동 관련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보냈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토부는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제나 협박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검찰 공소장에도 보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그와 관련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별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발언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의 잇따른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수사와 재판 중인데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위, 다른 때도 아니고 작년 국토교통위 감사 때 허위 발언한 부분에 대해 따로 우리가 위증 차원에서 고소나 고발을 검토하자는 건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트랙으로 위증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서범수 위원이 거듭 제기를 합니다.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은 아니시네요.

그런데 증감법을 상정하신 의원님들께 여쭙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은 허위의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막으셨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위증의 사안은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면 무죄고 남의 편이면 유죄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제로 힘으로 내일 통과시킬 이 증감법에 따라 누군가 찍히면 고발되고 같은 편이면 편안한 생태계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께 이 발언을 돌려드립니다. 당시 민주당 위원님들의 발언입니다. ‘당사자의 증언, 즉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다’.

앞으로 고발을 하시게 된다면 이 같은 취지로 저희가 증언을 한 당사자가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피해호소인도 아니고—그게 맞다라고 변호하면 안 웃으시겠습니까?

‘국토부에서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2013년, 2014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회의나 또는 국토부가 당시 종종 부동산 관련해서 TF, 협의, 회의를 한 것이 전체적인 사안만 보더라도 스무 차례 가까이 진행이 됐다. 이런 것을 압박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이겠는가. 관련해서 국감 때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위증이다, 아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민주당 위원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검찰총장으로 위증임을 고발할 수 있는, 수사기간의 연장을, 2개월 내에 수사를 끝마치지 못할 경우에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는 천하의 방망이를 쥐어 주고서는 의원님들은 앞으로 ‘우리가 위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처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려 합니까?

민주당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이것 관련해서 지난 국감이나 내용을 가지고 감사 요청 아니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도 많은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다’고 고발을 극구 반대합니다. 증감법을 정쟁유발법이라고 부를까요?

민주당 위원님은 ‘서범수 위원님의 말씀은 개인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것은 없으나 저희 위원회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일사천리로 증감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에서도, 전체회의에서도, 운영위를 넘어 법사위에서도 진실 규명, 처단, 이 같은 취지로 특정인 그리고 특정 기관을 겨냥한 다분히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이 있음에도 국민의힘의 위원들과의 토론과 대화의 기회는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백현동은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민의 주머니로 수많은 이익을 흘려보냈습니다. 김인섭 씨가 대표적이지요.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고 민의 최대 수익자들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장동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8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황홀한 잭팟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대장동 원주민은 반값에 토지수용을 당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전월세를 옮겨 다녔지요.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공직자는 범죄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본적 상식입니다. 자기가 수사하면 적폐 청산이고 자기를 수사하면 정치 보복입니까? 이 기만적인 이중 잣대가 지금 법치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와 진영 대결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두려워서 은폐의 대가로 제공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권력의 저수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위증을 한 증인이 있다 해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고발을 하지 못하는 이중 잣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예 위증도 할 수 없도록, 위증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증인으로 안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중 잣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운영위 전체회의 때—25년 9월 24일입니다—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 출석에서 배제하는 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했던,

동고동락을 같이한 동지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정치적 중요성 혹은 지근거리에 있는, 심미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세 여부를 떠나서 총무비서관은 기관증인입니다.

기관증인이란 지난 88년 국정감사가 재개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당연한 원칙이자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원칙을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총무비서관은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왜 총무비서관이 나오지 않는 것이냐?', 운영위에 있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되살리자면 비서실장의 답변으로도 충분히 총무비서관이 수행하는 임무와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의 대변인입니까?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더니 대통령실 내에서도 권력 서열 1위가 따로 있었군요.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는 전혀 들어 보지 못했던, 김현지 비서관에게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거나 신파조의 김현지 비서관의 불출석을 옹호하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총무비서관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는 자랑스럽게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평가합니다. 특활비의 내역을 공개를 하는 나름의 각오, 의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그 좋은 얘기를 마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대 홍인길, 정상문, 김백준 그리고 이재만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실세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더 어렵게 곤혹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김현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저렇게 겹겹이 감싸안고 내보내지 않으면 '아, 정말 실세구나'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만사형통'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분을 두고 시중에서는 '만사현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은 김현지 비서관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앞으로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까지 이분의 관할 아래 인사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시중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모든 분들이 앞다퉈서 '김현지 비서관은 실존하는 인물이시냐, 전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분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하면서 권력에 줄을 대고자 하는 분들이 수소문을 하고 다니지요.

저는 김현지 비서관이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본인의 처신에 잘 새기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삼권분립으로 존중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부르겠다, 특검하겠다, 탄핵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도 바꿨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하면서 굴욕을 줬던, 그 천하를 호령하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1급 비서관일 뿐인 한 여성 비서관 앞에서는 쩔쩔매시는 겁니까?

'만사현통'이 아니라면, 실세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국회법에 따라 또한 위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했던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호기로운, 오늘 법안 상정의 의지 그대로 원칙과 상식을 지키십시오. 저는 김현지 비서관도 이에 호응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시간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상당수 우리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공당이 맞냐, 왜 정쟁을 유발하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하니까 안 나오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총무비서관이. 그래서 오늘처럼 증언이 중요하고 위증은 더더욱 안 되는, 민주당 의원님발로 아주 결정적이라는 이 법안일수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큰소리로 막으면 막으실수록 저희는 두려움을 더 느낍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에.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사람을 고발하면 김현지 비서관을 부르는 데 찬성하겠다는 의원님이 계셔서 찬성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건을 붙이시더군요. 그렇게 조건이 주렁주렁 달리면 두려움도 더욱 주렁주렁 달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새 정부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활비, 대통령비…… 대통령실의 생활을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예산집행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시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증인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위증도 차단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아예 증인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떨까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송금이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청문회로 부른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전과 9범입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발언보다는 또는 검사의 발언보다는 전과 9범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하시더군요.

이 전과 9범은 사기 전력에다가 동거녀까지 흉기로 위협해서 위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서 이미 허위사실로 드러난 소위 연어 파티 스캔들을 두고서도 멀쩡한 검사와 수사관을 불러내서 거짓을 사실로 바꿔치기를 하고 겁박하고 집단 린치를 했지요.

위증을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을까요? 민주당이 대북송금 조작 TF를 구성한 것을 봤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지요. 지금 1심이나 2심이나 대법원 판사 10명의 결론이 동일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연어하고 짜장면 얻어먹고 거짓 자백을 할까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은 밤에 연어 주고 짜장면 먹으면 진술을 바꿔 주십니까? 온갖 거짓말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안 통했습니다.

해외 도피했던 배상윤 KH 회장, 그리고 이분이 본인 죄를 덮으려고 하는 말에 휘둘릴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인 김희수를 임명했겠습니까. 민정 라인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일을 하면서 세비를 받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같이 죄를 없애느라고 재판을 지연하느라고 있던 죄를 없던 걸로 만드느라고 세비를 쓴다고 하면 얼마나 혀를 차고 가슴에 피멍이 드시겠습니까?

이화영 달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나 보지요. TF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이화영이 사면이 되면 진짜 공범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선출된 공직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미묘한 방식을 이해하려면 축구 경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PPT를 요청드립니다. 7번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에서 보면 잠재적 독재자는 승리를 위해서 심판을 매수하고 상대 팀 주전이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규칙을 바꿉니다. 결론적으로 상대편에게 불리하게 경기장을 기울이는 것이지요. 특히 심판 매수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공무원과 일반인의 잘못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법기관을 운영합니다. 가령 법원과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규제 기관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이 책에 따르면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러한 제도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중립적일 수 있겠습니까?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경기도 정책자문은 금융시장 혹은 여러 다른 사건에서의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원후보로, 대장동 사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 보좌관, 특히 대북송금은 유난히 많은 진출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이지요.

이 정부에서의 4심제 그리고 대법관 증원은 아마 많은 변호사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사고 자신의 위세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고 어떻게든 재판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수단, 우리가 보통 꼼수 혹은 법꾸라지·헌법꾸라지라는 말로 듣는 여러 가지 법을 이용한 잔꾀를 부리게 될 때, 이번 정부에서 만약 대법관을 증원하고 4심제까지 간다면 돈 있는 분들의 천국이 될 겁니다. 무죄가 될 거니까 말이지요.

대북송금 이태형 민정비서관, 위증교사 조원철 법제처장, 민변 변호사는 국정원 감찰실장 그리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북송금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갔지요. 마치 이 정권을 보호해야 되는 저수지가 있다면 그 저수지를 지키는 수문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오히려 이 같은 규제 기관, 사정 기관은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지배자에겐 말이지요.

이 기관들이 본연의 독립성을 유지할 때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즉 경기 심판으로서 선수들이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정권의 충신들이 이런 기관을 장악할 때 이러한 제도는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주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시민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수사나 검열에 대한 걱정 없이 헌법을 위반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지요. 그래서 심판 매수는 이렇게 보호막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독재자는 법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서 정적을 처단하고 동지는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얻게 된다고 이 책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에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장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릴까요. 장표 5번입니다.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 언어의 왜곡. 사실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방송 3법이 통과됐을

때 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다고 했지요. 그러나 정치권력이 자신이 감싸고 도는 인사를 추가로 이사로 배정한 것에 그친 그 법이 과연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걸까요?

2단계는 반대 세력 악마화입니다. 충분히 국민의힘이 겪고 있지요.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겨울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내란 몰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 돼 가고 있지요.

3단계, 국민주권론 내세우며 선출 권력 우위론을 설파한다. 국민의 의지 절대화입니다.

사실은 저는 정치 언어의 왜곡일 때 국민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권력자? 선출 권력? 아닙니다. 그 시스템은 국민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만든 헌법에 삼권분립을, 법치주의를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국민을 들먹이는 겁니까, 국민주권이라고요.

사법부·독립기관 무력화가 4단계입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특판 등 법원 독립 훼손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 자유의 억압, 징벌적 손배 제도가 추진되고 방송 3법 개정에 방송 장악이면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 문화일보에서 교수님께서 이 같은 이론을 함께 적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당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위협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야당과 사회운동의 해체 단계까지 대한민국이 머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어윈 루처라는 신학 박사의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히틀러를 분석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잠시 소개를 좀 해 볼까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몰살이 되어야 될 인간 이하의 기생충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가 1923년 뮌헨에서 한 연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종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없다. 유대인은 악마의 형상이다. 유대인은 국가의 인종적 결핵을 의미한다'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동물과 같은 범주로 간주를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음을 보증했지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그는 이 종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은 유대인을 사람이라는 신분에서 제거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동물보다 아래에 있다는 히틀러의 선언으로…… '하인리히 힘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힘러는 자신의 전위대를 이용해서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청신호를 얻었습니다. 친위대는 법을 어기지 않고도 유대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 뒷받침해 줘서 말이지요.

그런 해충을 독살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재판도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 땅은 인간의 피가 혈관을 통해 흐르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오물을 반드시 깨끗하게 청

소가 된 상태로 둬야 된다 이게 그들의 입장이었고 법으로도 뒷받침됐습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말한 게 있습니다, '악도 선이라고 부르면 선이 된다'. 바로 법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법은 국가의 우선순위 그리고 정책 그리고 가치를 반영합니다. 종교가 사유화되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정부하고 분리가 됐던 나치 독일에서도 자연법은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의회를 장악하고 또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가 만든 법은 전체주의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차곡차곡 제정이 됐습니다.

나치가 선언한 게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가 곧 법이다라는 겁니다. 괴링이 말한 것처럼 법과 총통의 의지는 하나다. 옳고 그름은 히틀러가, 그 일파가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35년—많이 아시지요—9월 15일 날 뉘른베르크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독일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속적인 상태로 만들었지요. 이 법은 유대인과 아리아인 사이의 결혼 그리고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유대인들에 대한 열세 가지 행정규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법률상 보호를 완전히 박탈한 거지요. 유대인 중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고 또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도시에서 음식을 사거나 사업하는 것 또한 금지가 됐지요.

그런데 내란처럼 반역에 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반역은 제국의 의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비판,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제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실에 계시는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위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언론인들이 저와 만나면 질문을 할 때 물어야 할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물어도 되는 것을 묻게 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곳에 정보의 공개라는 이유로, 공정한 투명한 진행이라는 이유로 유튜버가 질의 과정을 생중계할 때 자칫 이분들의 목표와 이분들의 의도에 관계없을 경우에 그 기자는 심각한 패싱, 즉 유튜브를 통한 낙인이 찍히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언론인으로서는 가장 묻고 싶은 것을 물어야 하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묻는 것은 치욕인바 이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랐겠지만 저와 만난 언론인들은 어쩔 수 없는 자기 검열에 시달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 또한 그분들과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 언어에, 누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고 했습니까? 누가 방송을 국민의 품에 안겨 준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정부에 대한 비판, 언론의 자유,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1934년에 반역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도 인민재판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다만 그곳은 판사가 30명은 아니었다는 데서 우리와 차이가 있지요. 각 법원에는 5명의 판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들 중의 3명은 국가 전복 활동에 대한 특별한 방어 지식이나 국가의 정치적 성향에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히틀러나 그의 동료 중 하나에 의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재판의 절차는 비밀이었고 처벌은 엄중했습니다. 크림슨-레드 포스터는 아마 그 안에서 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집행관의 도끼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경험은 국가의 법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의 정책과 그 자치를 지배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마치 법체계 뒤에 신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법의 근원은 개인이자 신입니다. 사람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면, 국민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지시하거나 만든 사람이 신이 되지요. 신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 신이 될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히틀러는 법을 제정하는 힘으로—책의 저술을 계속 읽어 드립니다—무기력한 그의 반대자를 조롱할 수 있었다. 반대자들에게 호의적인 법은 없었다. 그들은, 반대자들은 그들을 향한 비난을 방어할 수도 없었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도 설교의 남용 그리고 반역과 같은 증오범죄로 고발이 되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도덕적 환경은 이제 법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히틀러가 법을 만들었을 때 독일을 히틀러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었지요. 인용을 하자면 '너의 법을 나에게 보여 줘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너의 신을 보여 줄 것이다'라고 러쉬두니가 말한 바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히틀러가 패배한 후에 뉘른베르크에서 히틀러의 심복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쟁이 일었습니다. 히틀러의 심복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럴듯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법률 체계의 보호 안에서 수행이 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격이 재정의되었기 때문에—인격의 재정의, 아까 보셨던 1단계지요. 정치 언어의 조작입니다—그런 사람들을 살해하더라도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그 시대의 법원이 내린 법을 따르고 있었지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한 것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에 관한 책을 보시면 거기에 아이히만이 나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나는 법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하는 가장 적극적인 변호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관점에서 보면 법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진술이었지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아이히만이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나는 단지 전쟁법과 내 국적을 따르고 있었다'.

실제로 나치즘은 총통의 법은 독일에서의 공동생활법 개념을 직접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총통의 법을 그르치게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지명 후계자였던 괴링이 뉘른베르크에서 '이 법원은 나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나는 독일인이다'라고 외친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떤 법으로 나치를 재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굳이 그와 같은 독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몸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증의 엄벌을, 그것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손에 쥐여 준 것을 보면서 '아, 그러면 위증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 전에 '위증 또한 추미애 위원장이 다 개념을 결정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은 이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연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대북송금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에서 뒤집어 보고 싶고 없애고 싶고 또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이라고 불렀던 검찰 해체 청문회에 저희 의원들의 발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그 당시의 속기록을 구해 보았습니다.

있는 진술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박상용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법사위에서는 이 정부가 범죄자 주권 정부, 전과자 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입법부인 민주당 위원들에게 재명무죄냐라고 외쳤지요.

증인 박상용입니다. 연어와 관련한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중에서 신동욱 위원 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연어회 얘기를 또 하시는데—민주당 위원들이요—그 당시 수사 정황이 연어회 한 접시 얻어먹으면 진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습니까? 양심껏 한 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박상용 검사, 해당 사건은 800만 불, 지금 우리나라 원화로 100억 원이 넘는 뇌물 사건입니다. 요새 아무리 사소한 사건도 먹을 걸로 회유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100억 뇌물 그리고 당시 유력 대선후보가 관련된 사건을 어떤 먹을 걸로 회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거겠지요.

신동욱 위원, 그렇지요. 먹을 걸로 회유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화영 증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대법원 선고까지 난 사건을 갑자기 연어회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북한으로의 800만 불 대북송금 과정에서 쌍방울이 이 사안을 도와준 것을 보고를 했다라는 그 진술 하나 때문에 이화영 당시 부지사의 부인까지 법정에서 볼썽사나운 공격을 했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교체되는 시도가 있었고 급기야는 수사관들이 검사를 포함해서 연어와 술을 먹이면서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의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를 청문회에 불러서 '당신이 연어를 먹인 게 아니냐' 그 얘기 하려고 온갖 사기꾼까지 증인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증인 박상용, 위원님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연어회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를요—일단 법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미 이 사실이 모두 유출돼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 사실을 사용해 검찰 수사를 비방하는 등 지금도 이미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동욱 위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지요. 이화영 씨가 억울하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사건인 겁니다.

신동욱 위원이 이어 갑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이 사실상의 파행을 유도해서 국회의원 세 명의 입을 막았는지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변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검찰개혁 청문회라고 하는 검찰 해체 청문회는 6일 전인 9월 22일에 벌어졌습

니다.

저희들 입을 막고 민주당에서 발언권을 집중적으로 갖고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방금 발언하신 신알찬 변호사님……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겠습니다, 신문지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신홍석 변호사님과 김 모 위원님, 김용 씨 변호인 아니셨습니까, 두 분? 저 평소에 김 모 위원님 존경합니다만 과거에 변호인이셨잖아요. 김용의 변호사셨지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자들 변호인이 위원으로 쭉 나오시고 지금 신알찬 변호사님도 변호인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이 말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끼리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주고받고 김용 씨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들려고 지금 이 사법개혁이라는 청문회를 하셨습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 여러 측근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비리가 이어지자 '그런 사람들을 두고 측근이라 얘기할 수 없다. 적어도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 당시가 앞에 팻말을 붙여 놨을 때 추미애 위원장이 세 명에게 강제적으로 퇴장을 요구했던 날입니다.

신동욱 위원이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라시는 것이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권을 집중적으로 줘서 후배 검찰들 압박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래 너희들은 개혁해야 돼' 이 말씀 하시고 싶어서요? 아니, 여기 앞에 솔직히 많으시잖아요. 이재명 변호인분들 출신의 의원님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양심이 있으시면 이런 청문회 스스로 회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이해충돌이었지요—법관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이 사법개혁 청문회 진행하실 자격 있는 분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시잖습니까? 두 변호인이, 그것도 서로 김용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변호하셨던 분들이, 질문하는 국회의원도 김용 변호인이셨고 답변하는 변호사도 김용 변호인인데 이 두 분이서 주고받으면서 '수사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검찰 청문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나오신 증인들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웃지 못할 코미디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미애 위원장님 사사건건, 하나도 중립적으로 진행 안 하시고 이런 중요한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야당 국회의원 뒤에 방호원들 죽 세워 놓으시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추미애 위원장이 급하셨으면, 여성까지 포함된 세 명의 의원이었는데요, 아마 여기 방호원들을 10명 넘게 배치를 했을 겁니다. 직권남용입니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고요. 동 시간대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노트북 앞에 패널처럼 붙여 놨지만 어떠한 제지도 무력 행사도 없었습니다. 힘을 써서라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차단하고 방해하고자,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겁니까? 대통령 눈에 들기? 지방선거 나가기? 그것을 얻은들 국민들 다 떠나고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긴 민주당에는 개딸이라는 국민이 있으시지요.

주진우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습니다. 지금 벌어진 광경은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죄

송하지만 김 모 위원님, 김용 재판의 직접적인 변호인이었고 그 변호인 신문에서 직접적으로 증인 신문 했는데 그 동료도 그 증인도 동료 변호인입니다.

국회에서 재판을 연 거지요. 제가 이 증감법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 입법부가 사실상의 준사법기관으로서 또는 재판소를 차려 놓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위증을 할 수 있는 증인을 불러 모아서 마치 위증이 아닌 척 할까 봐 그것이 두렵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재판을 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발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무슨 절차적인 보장이 됩니까? 민주당에 적대적인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면 입 막아 버리고 발언권 뺏고 말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서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말이지요,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공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연어를 동원해서든 짜장면을 동원해서든 연어횟집에서 비닐봉투 100원 주고 빌려 왔다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4100원으로 끝나는데요, 그 가격은요. 그 100원이 비닐봉투 값이라고 해서 굳이 연어잔치를 얘기하고 싶어 했던 이들이 방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공개가 됩니다.

박상용 검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짚을 건 짚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검찰 개혁의 취지를 공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민주당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마치 어느 한쪽을 누구의 잔당인 양 그렇게 몰아붙였던, 인신공격으로 대화할 시간 토론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미래지요.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겨우 전과 9범인 조경식의 증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흉기로, 자신이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했던 그 조경식입니다.

조경식의 전과 보셨습니까? 절도, 사기, 장물…… 잡범입니다. 잡범으로 수감 많이 하고 수사 많이 받아 봤으면 수사체계를 잘 알지요. 수사 개혁의, 그런데 검찰 개혁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수년간의 재판에 수백 명의 증인을 불렀던 이화영 재판을 다 무위로 돌리자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는 6억 원 대선자금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입니다. 2심까지는 다 유죄였지요. 그 상태에서 대법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판에서 변호인들끼리 증인 신문하면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화영 800만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800만 달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시 쌍방울이 자금 사정도 여의치가 않았지요. 그런데 800만 달러를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수법을 다 동원합니다. 중국에 가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화장품인 것처럼 숨겨서 북한에 보냈지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자신이 부과받은 이 과제를 수행했는지 모릅니다.

돌아가 볼까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는 현금 미화 800만 달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심지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화영 부지사 감싸고 오히려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지금 증인이지요, 조경식 전과 9범—그 사람이 지금 검사를 닦달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박상용 검사님, 이화영 수사하셨지요?

증인 박상용, 예,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이화영 증인에게 계속 물어봤을 때 연어·술 파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지만, 부지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연어·짜장면 얻어먹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었다는 것도—표준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해석을 달리 하겠습니다—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다 털어놨다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연어를 먹었다는 날짜가 계속 바뀝니다. 이제 5월 17일이라고 날짜를 다시 특정했는데요—박상용 증인에게 묻습니다—그때 연어·술 파티 있었습니까?

증인 박상용, 없었습니다.

주진우, 연어·술 파티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지요?

증인 박상용, 그렇습니다.

주진우, 제가 법무부 보니까 재소자 2명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재소자들은 들은 얘기들을 같이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재소자가 무슨 직접적인 증인이 됩니까? 거기다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 전수조사 했지요?

증인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때 연어·술 파티 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교도관이, 40명 넘는 사람들이 다 허위로 증언했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재소자 말 듣고 이걸 한번 흔들어 보려고 부르는 거거든요.

묻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사건을 사전·사후에 다 보고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 박상용의 답변은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재판에서 국민들 볼썽사나운 부부 싸움이 있기 전에 몇 개월간 그 자백이 유지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재판 중간에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싸우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공격하는 배우자를 말리기도 했지요. 어느 정도 자백이 유지되는지 묻습니다.

증인 박상용, 5월경부터 자백이 시작돼서 6월, 7월까지는 자백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이 가능한 거지요. 만약에 연어와 짜장면을 먹고 그 증언을, 즉 이재

명 당시 지사를 모함하기 위해서 보고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이재명 당시 지사를 모함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그 증언이 한 석 달 정도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100% 그게 맞다고 치자라는 전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함했다고 거짓 진술이라고.

여기서 묻습니다.

보통 자백을 하는 경우는 범죄자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모르고 범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증인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수사기관이 몰랐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자백으로 인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가 있었지요?

증인 박상용, 제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도저히 검사가 알 수 있거나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서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에 속기록에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검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자백을 했겠지요.

주진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습니까?

증인 박상용, 약 4월 말 5월 초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즉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정원 문건이 대북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 국정원 문건이 입수된 후부터 자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대북 송금 800만 불이요—얘기하면서 수사진에게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려 줬다는 거지요.

증인 박상용,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국정원 문건을 알려 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의외였는데요, 반전이 있습니다—그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 중에 상당수의 내용도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요원에게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 씨를 이화영 씨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국정원 요원이었고.

안부수 씨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해외 요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북한과 중국, 한국을 넘나들며 사적으로 돈을 전달하거나 북한 인사를 만날 때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부수가 북한에 갈 때마다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 문건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진술한 내용과 추후 국정원 문건에 있었던 내용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었지요—그래서 대북송금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라고 박상용 검사는 이야기합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번복하고 나서 계속 나중에 다투었지만 사실은 그런 국정원 문건 같은 것을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찾아내고 그 증거가 유력한 증거로 쓰이면서 대법원 유죄 확정이 난 것 아닙니까라고 묻습

니다.

박상용,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결국은 검찰이든 누구든 정말 아무도 이화영 부지사의 그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무슨 문건을 작성했는 줄 알고 수백 건, 수천 건 혹은 수억 건에 달하는 사실을, 그중의 하나를 검사가 증거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아주 친밀한 친인척이어서 그 사실을 이화영 부지사만 공유받고 본인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던 사실을 수사기관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왔고요.

사실은 그 정도면 중형이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그 정도 중형을 받았으면 당시에 상사로 있던 이재명 지사는 어떤 형을 받아야 했을지,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의 정권교체에 대해서 안도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날을 잊지 않고 더 정책 정당으로 그리고 올바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 범죄에 있어서 범행에 어떤 도구가 쓰였는지 범인만 알지요. 그 범인이 '이곳에 숨겨 놨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자백으로 수사관이 찾아가서 수천만 평에 달하는 그 넓은 부지 속에서, 특정한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화영 지사의 자백과 같은 상황이 안 오면 불가능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대목이었지요.

연어·술 파티, 박상용 증인은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 1년 반 전부터 논란이 일었는데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법정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상대 진영에서는 역사의 법정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문회 불러 놓고 발언권을 다 뺏어 버렸습니다. '정청래보다 더한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판정승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추 위원장이 정상적인 운영을 해 주셔야지요.

박준태 의원의 발언입니다.

의회에서의 발언은 의원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인데 그것의 반대로 발언권을 뺏고 입틀막하고 퇴장까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삼권에도 서열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이렇게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음을 이야기한 적 있지요. 직접선출 권력, 간접선출 권력보다요—선출된 의원들 왜 말도 못 하게 합니까? 간사도 안 시켜 주고—나경원 의원이지요—주진우 위원 괴롭히려고 법안소위에도 배정 안 해 주고 이제는 아예 청문회 불러 놓고 발언권을 뺏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추미애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정청래보다 더한 추미애 판정승'.

이 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내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님보다는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독특하게, 괴팍하게 전례 없는 운영 독재를 할 거라고 믿어 의심

치 않아서 이 법안을 그렇게 만드셨나요?

박준태 위원입니다. ‘제가 당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가 훨씬 더 괴롭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박준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교섭단체대표가 추천하는 취지의 추미애 방지법입니다’. 일명 추미애 방지법이지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을 애써 법안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데 세간에는 범죄자 주권 정부다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민주당의 조작 정치, 선동 정치 그리고 범죄자들과의 공생 정치, 이런 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 핵 폐수 테러,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써 가면서 모든 얘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가지고 국민 선동하는 게 그런 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치 아닙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광우병 괴담, 뇌송송 구멍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지요. 국민들의 음식과 관련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2008년 당시에 우리나라에 광우병 소가 반입이 됐거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괴담을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마치 눈앞의 정육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음모와 선동에 속절없이 정권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라스트 블로(Last blow)라고 하는 결정적인 타격을 정권 초기부터 제대로 던진 거지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시위대 전면에 나와 주셨지만 지금도 문제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유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드 전자파 참외, 성주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외와 전자파 사이에 상관관계도, 검출된 것이 단 한 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받았던 피해, 점포의 몰락, 생업이 망하는 것은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정치인의 말은 순간이지만 국민이 입는 피해는 영원합니다.

핵폐수 테러는 1년간 수조 원의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어와 홍보, 즉 생명의 방어와 안전하다는 홍보를 위해서 멀쩡한 세금이 조 단위로 쓰여졌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마구 루머를 퍼트리고 내 돈이 아니라고 바닷가에 그물을 던져서 생업에 나가야 되는 어민들을 내 정치 슬로건의 희생양으로 삼아도 되는 겁니까?

정치는 과학이 아니라는 걸 그때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과학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로 국민들께 설득하려고 해도 이미 선동으로 선점당한 국민들의 머리와 가슴속에서는 자극적이고 그리고 국민 편에 서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정치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실 수밖에 없었지요.

조작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박준태 의원이 이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려고 조작된 음성파일을 마치 본인이 얘기한 녹취록처럼 그럴싸하게, 국민 상대로 대형 사기극을 벌인 거지요. 사과를 안 하십니다.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시지요. 면책특권 뒤에 숨겨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적용해서 빠져나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 읽은 기사를 보면 이 가짜뉴스를 이야기한 그 의원님이 해당 출처의 유튜브, 본인들은 언론매체라고 하지요. 열린공감TV인데 이 발언이 나온 뒤에 열린공갈TV가 되어 버렸습니다. 열린공감TV 측에 출처를 물었다는 기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일선 초년병 기자들도 내가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세 번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워싱턴포스트가 할 수 있었습니다. 딥 스로트(Deep Throat)로부터 받은 제보가 치명적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틀릴 수 있는, 즉 오보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적어도 3명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러나 기자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의원이 사실확인은 하지 않고 이 가짜뉴스를 틀었다고요? 그거 위증 아닙니까? 오히려 사기범 같은 증인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은 분명 믿는 구석이 있고 확실한 소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가짜뉴스와 그 지라시가 오히려 위증 아닐까요?

저희가 당시에 누군가의 전언을 혹은 자신의 입으로 옮긴 듯한 그 발언의 음성이 AI인지 아니면 사람의 음성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성문분석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1차 소견은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정교하게 여러 번 뭉개지고 여러 번 성문이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 고도의 소스를 그럼 해당 의원은 뭉개진 걸 알았을까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을 떠나 입법권을 가진 의원의 신분을 떠나 함께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도리입니다.

박준태 위원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전과자 좀 그만 부르세요. 자꾸 범죄자를 국회로 데리고 오니까 '범죄자주권 정부' 이런 말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건 그거 뒤집어 보겠다고 사기 전과자 부르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그거 무마하려고 사기 전과자 더해서 조폭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박준태 위원이 규정을 내립니다. 유전무죄가 아니라 재명무죄 세상이다라고 말이지요.

그동안 법사위에서 생산된 거짓 정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증인들을 보면 전과 4범의 마약 전과 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아들 생일파티를 검사실에서 열어 줬다. 법사위에서 검증한다고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들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날 장시호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소에 있었다고 확인이 됐을 텐데, 그 뒤의 불행한 일들을 저희가 기억하지요. 또 장시호 위해서 공유 숙박시설을 예약해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다고 하네요.

조경식, 사기 9범, 절도, 장물, 변호사법 위반, 올해 초에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회칼을 들고 폭행하다가 수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조폭 수준의 데이트폭력 하고 이런 사람을 불러 가지고 해당 의원은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추켜세웠지요. 그리고 검찰은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지요.

맞습니까? 요즘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 희망한다고요? 국회에서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공무에 보람을 느낄까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수사지휘, 아니 보완수사권이라도 확보하면서…… 마냥 수사가 늘어져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세상에 가장 약하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범죄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법부터 통과하고 보는 겁니까?

제가 이따가 돌려차기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범죄자들 동원해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했다, 증거 조작했다, 검찰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다 불러서 망신 주고 무슨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지고 탄핵 조사해야 된다. 법사위에서 청문회 열어 가지고 이런저런 망신스러운 얘기들,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역시였던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법사위에서 검사 좌표 찍기, 실명 공개하기, 사진 공개하기에 대해서 적법한 행위인가 물었는데 대체로 처벌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하신 모양입니다. 장관이 이런 것에 대한 면죄부를 준 거지요.

민주당은 왜 그런데 범죄자는 감싸고 검사는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나요? 아니, 검찰이 나쁘면 정말 박 위원 말대로 검찰의 수사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개별 검사를 찍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모욕 주고 망신 주고, 아까 단계별로 나왔지요, 망신 주고 낙인 찍기. 그 사람들이 특검에 파견 가서 일하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좋은 검사 되는 겁니까?

검찰 책임이 있지요. 늘 정치검찰,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권력이 늘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혹은 조금 더 힘주어 만들어서 이런 개혁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분명히 줬습니다.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돈봉투 받았다는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공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충이 크실 텐데 수사의 진행 상황이 전혀 기사에도, 어느 곳에도 알려지는 바가 없습니다. 이 조용한 침묵은 비겁한 거지요.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는 특검에 대해서 별도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관봉권 띠지는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고 하시지요?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강백신 검사가 고생을 했지요. 모해위증으로 수사 감찰을 받았기도 했고요, 엄희준 검사는. 아까 연어와 관련해서 박상용 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네요. 그래서 연어와 소주와 관련해서 변호인도 같이 동석을 했었다. 5월 17일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사를 한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변호인이 동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연어를 준다든지 술을 준다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워낙, 민주당 측에서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한번 찔러 보고 저게 아니면 또 다른 날짜를 창의적으로 구상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나온 모양이에요. 골대가 바뀌듯이 아마 날짜가 바뀌었던 모양인데, 민주당의 주장이요. 상식선에서는 저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습니다만 누군가에게 먹을 걸 줘서 그걸로 회유돼서 진술을 받는다. 부지사를 하고, 그것도 경기도부지사를 하고 국회의원 했던 분이 연어와 짜장면을 먹고 회유가 돼서 진술을 강요받은 대로 해 준다라고 하면 정말 수사하기 편해질 것 같고 정말 많은 사건들이 해결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현재 교도관 1명, 재소자 2명이 진술을 새로 했다고 아마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전수조사, 경찰 수사, 재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까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국정감사를 할 때 자주 썼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면 '제가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하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네가 정상이라는 것을 입증해 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엉뚱한 의혹으로 뒤집어씌우기를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실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실체 규명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난하고 힘든 과정일지, 하물며 우리 사회에서 아주 힘 좀 쓰겠구나 하는 검사에게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내가 피해를 보고 수사를 받아서 권리구제가 되고 싶은데 보다 더 힘센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한 심정인지 법을 앞으로 만들고 통과시키실 때 증언감정법 같은 실수를, 그리고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조경식 씨가 자칭 KH그룹 부회장이라고 그래서 한동안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분이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불렸지요. 이분의 혐의 내용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사기 전과가 9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초에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분인데, 최근에 검찰개혁에 있어서 이분이 우상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받들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증인으로 부른 조 씨는, 그러니까 즉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다라는 입증을 위한 그런 간접 진술을 위해서 증인으로 나온 조씨는 지난 4월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공갈—인생이 특수였네요—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2021년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돼서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자유를 되찾은 지 8개월 만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네요.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동거녀 A 씨 집에서—43세입니다—자신의 짐을 싼 뒤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 깨끗하게 잊겠다'라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쓰고 A 씨의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 씨의 마음이 금세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15시간 뒤지요—흉기를 들고 다시 A 씨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간 조 씨는 귀가해서 주차 중이던 A 씨에게 다가간 뒤 A 씨를 차 안에 밀어 넣고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이후 조 씨는 A 씨를 위협해서 A 씨 집으로 들어가서 '경찰 부르는 순간 너는 죽는다'며 A 씨가 조 씨를 못 이겨서 떠난 지난 1월 9일 이후에 '내가 악에 받쳤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 날'이라 말한 사실도 수사 결과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조 씨는 다음 날 오전까지 A 씨를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아 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A 씨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지요. 조 씨는 이후에도 A 씨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는 A 씨 집 지하 주차장에서 또다시 A 씨를 만나려고 기다리며 열두 차례 전화로 위협한 사실도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청문회는 거쳐야 될 단계인데요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를 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 누구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서라도 데이트폭력 있는 사람은 증인

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카를 변호하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해, 데이트폭력이 아니었지요. 살인으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자신의 조카를 데이트폭력이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지 데이트폭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친척인데 변호를 하자니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공인으로서, 지금 그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듣는 많은 여성들은, 많은 20대의…… 힘없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오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을까?', 단 한순간이라도 고민할 수 있는……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살인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폭력, 그 네이밍에 가슴속에 멍울이 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데이트폭력 하는 사람 불러서 살인하는, 살인 직전이었습니다. 증인으로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을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대북송금 뒤집으려고 해 봤자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프레임이 다 전환되는 것, 프레임 잡는 것 잘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세요?

(9월28일 24시 경과)

사기 전과만 9범에 절도와 장물 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전과까지 있던 조 씨는 A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됐지만 이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조 씨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조 씨가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일명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하자 서영교 위원은 '국민 여러분, 잘 봐 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라며 조 씨를 환대했다고 기사에 되어 있네요. 매일신문 9월 19일 자입니다.

민주당은 조 씨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이름도 기네요. 조 씨의 발언을 근거로…… 원래 둘러댈 게 없으면 타이틀이 길 수 있습니다. 조 씨의 발언을 근거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이 밝혀졌다.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받아 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조 전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갈등 끝에 증언을 결심한 만큼 조 전 부회장의 법사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이상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한 분은 최고위원이고 한 분은 서 위원님이시네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수사가 복잡다단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수청, 이것 한 번에 다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 흩트려 놓으셨는데요. 제가 아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변호사를 살 정도로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 싶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높은 사람은 금리가 낮으면, 신용이 또 낮은 사람은 금리가 높으면 잔인하지 않느냐'라는 대통령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돈을 성실하게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으면, 부자

면 금리가 낮고 돈이 없으면 혹은 가난하면 금리가 높은 것은 부당하다', 서민금융을 강조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시장경제의 질서,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많으면' 이런 말은 쓰지 않고 '변호사를 대량으로 고용할 정도로 재력을 갖추면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싶은 사람'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시간 끌기가 쉬워집니다. 복잡하잖아요. 이게 공소청으로 가야 되는지,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지, 국가수사위원회로 가야 되는지, 일상에서 내가 생계도 급급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당장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변호사라도 사라고 하지만 어디 그게 한두 푼입니까? 변호사를 못 찾아가면 변호사비를 낼 수 있는 사람만 이 복잡한 제도의 수혜를 입겠지요. 이 절차가 다 돈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정권 초기지요,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새롭게 출범한 분들마다 얼마나 의혹이 많겠습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 공소청,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벌일까요? 그래서 특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내가 특검을 했지만, 내가 특검보를 했지만 임명직에는 가지 않겠다' 선언해 보십시오. 모든 정당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당으로 와 주십시오', 아마 공천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비단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는 그만큼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판결하듯이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지요.

얼마나 아귀다툼을 벌일지 눈에 훤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어떻게 줄세울지, 아마 공적 상신하라고 은근슬쩍 뒷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경쟁하느라 민생은 뒤처지게 될 거고요. 서로 핑퐁을 하느라 역할과, R&R이라고 하지요, 롤 앤드 리스폰서빌러티(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는 겉돌고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중국도 그렇게 위원회가 많다는데요. 우리도 보니까, 위원회만 뽑아 보라고 하니까 이번에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수사민주화소위, 국민주권전문위원회, 지역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발음도 안 되네요. 수십 개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시민단체, 분명히 민변분들 적극적으로 시장이 열렸을 거고 수사·기소에 관여하는 위원들이 수백 명일 텐데 거기 가 있는 분들도 자기 위원회가 뭔지 스스로 기억도 못 하지 않을까요? 위원회가 많아서 연막을 치는 것, 위원회가 많아서 사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인민재판소, 인민검찰, 공안청, 사법청, 경찰서, 공안분국. 복잡한 제도로 중국은 탄압과 국민 숙청, 반대파 숙청에 활용하지요. 왜 중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그대로 따라하느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 기울여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날 발언한 겁니다, '그게 무슨 위헌인가'. 이 이야기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민 뜻이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말씀하신 뜻이. 사법부는 입법

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 쉽게 말해서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포함해서 어떤 외부세력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게 할 것인지 그 결정권은 사법권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가 내란재판부를 만들어서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 외부인이 직접 재판부의 구성에 개입하는 것 이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볼까요? '내란특별'이 좀 부담이 되시니까 '전담'이라는 말씀을 쓰셨던데 그게 더 문제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비슷해요. 소급 입법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해결했고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직전에 수정안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소급 입법을 없애는 걸로. 그런데 소급 입법을 없앤다고 하면서 혹 떼려다 혹 붙였지요.

의장님 대신 추미애 위원장으로 갈아 치우면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사실상 준사법기관, 즉 검찰총장으로 추미애 위원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입법부의 검찰총장. 수사 기간 연장 그리고 수사 기한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징계 요청 그리고 이 모든 보고를 받는 한 국회의원을 마치 사법부에 있는 준사법기관의 장처럼 만드는 수사지휘를 시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헌법 논리입니까? 그래서 위헌이라고…… 사법부를 점령하는 입법부, 사법부를 침탈하는 입법부,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이 부여하지도 않은 그 임무를 과잉으로 가져간 이 법안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국회나 대한변협이, 법관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외부인들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 구성에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지요. 특별영장전담법관 지정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결정을 하는 법관은 특히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이나 특별법원은 허용을 하지만 그 외에 일반 사건도 아닌 특정인을 겨냥한, 특정 사건을 겨냥한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과 학계의 지적이지요. 아까 '특' 자 좋아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조경식 씨. 그러니까 특별법원, 조경식 씨랑 엮이지 않으시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특별재판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란특별재판부의 민주당과 다른 것은 그때는 헌법에 근거를 했지요. 반민특위 기억하십니까?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그리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도 각각 헌법 부칙에 그리고 헌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제헌헌법과 제4차 개헌을 통한 헌법 부칙에 근거해서 규정을 두었지요.

박희승 의원님이 요즘 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당이나 이해합니다. 비주류로 혹은 주류의 흐름을 거슬러서 김어준 총수에게 보고하고 김어준 총수에게 사랑받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입바른 소리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의원님이 그 얘기를 했네요, '특별재판부로 재판을 했다가 재판 구성이 위헌으로 판정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말이지요.

증감법에 대해서도 상식 있는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양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론을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한 고심 또 갈등, 해 본 적이 적

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또 현재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것이 나중에 정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인 것 같다라는 게 아니면 당론에 따르고 그 당론을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되도록 설득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지킵니다. 어쩌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설득과 소통은 우리 정치인에게 부여된 천부의 의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사실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께 그 용기에 제가 인정을 하고 감사를 드렸던 게 아주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밤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고 뒤엎어졌으니까 말이지요.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협조하기로 했던 그 합의문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혀졌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주권자인 개딸에 의해서라고 많은 분들이 추정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강성지지층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강성지지층의 요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으면서 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갑자기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어떻게 맞바꾸느냐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시면서 더 센 특검법이라 불리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다수의 힘자랑, 좋지요. 그런데 그거를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장표를 요청드립니다. 10번 장표입니다.

전 세계 공전의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3회를 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봤는데……

왜냐하면요 영화 속 대사가 가슴을 콕콕 찌르더라고요. 제가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특히 바로 저 대목 때문에 그렇지요, '다수결로 저희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 주세요'.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간 참가자들이 영화 속에서 보면 한 30~60m 정도 되는 높이의 원통 위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떨어져야 나머지 사람이 생존하는 게임을 벌이게 됩니다. 이 게임은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다수결의 원리인 거지요.

한 게임에서 다른 게임으로 진행하는 여부도 시즌1과 달리 시즌2와 시즌3는 생존한 참가자들이 진행할지 중단할지 투표로 결정합니다. 저는 마치 이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독재사를 다 꿰뚫고 섭렵한 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 게임이 다른 게임으로 끝날 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마음속의 악마 본성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는 이 게임을 찬성해서 보다 많은 포상금을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여리고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충 몇십 억만 받고 떠나가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포상금이 줄어들까 봐 사전에, 투표가 되기 전에 가급적 그같이 게임을 중단하고 싶은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모함하는 일을 벌이기 때문이지요.

지난 독일 의회의 대학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표를 하나 부탁드릴까요.

다수결 얘기가 들어가니까 하나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히틀러는 처음에는 폭력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위에 돌

아가자 수감이 됐지요. 수감생활을 하면서 히틀러는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는 불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잡을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아야겠다고 말이지요.

1933년에 베를린 의사당 방화가 일어납니다. 의사당 방화는 사실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수설은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그때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에 밤 9시를 넘기고 불이 납니다. 바닥 면적만 6만㎡를 넘지요. 의사당의 대부분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통일을 공부하고 싶어서 2022년 8월에 독일을 갔는데 베를린에서 아직도 그을음이 있는 그 베를린 의사당의 조각을 전시하고 있는 것을 봤고 그 위의 옥상에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범인이 너무 빨리 잡혔습니다. 그때 마리뉘스 판데르 뤼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배관공처럼 수리를 하면서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산당원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학계의 다수설은 그 당시에 의석을 공산당보다 확보하지 못했던 히틀러의 일당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건물 안에 넣고 방화를 하게 한 후 협박을 해서 그 방화가 성공하자 마치 그 자리에서 붙잡았던 것처럼 경찰 책임자를 대기시키고 공산당에 의해서 독일 의회에 불이 질러진, 폭력과 방화의 주범으로 공산당원을 몰아붙이면서 결국 히틀러의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또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는 기틀이 된 거지요.

이른바 위기를 스스로 만들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독재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수결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다수결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독재를 법으로 완성한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이라 하면 악도 곧 선이 된다. 그리고 히틀러가 곧 법이다'라는 말이 만들어졌던 거였지요.

다시 오징어 장표를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번호를 안 불러도 오징어 장표라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 주세요'라고 하면 거기 있는 나머지 체력이 약하고 그 안에서 열등하게 여겨졌던 참가자가 호소합니다, '왜 나를?'. 그랬더니 그들은 네가 밉다거나 아니면 네가 열등해서라는 그런 생리적 혹은 감정적 언어를 내뱉지 않습니다. 정중하고 정의롭게 다수결로 결정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과 게임 사이에도 투표를 할 때 오징어 게임의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 게임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폭력을 합리화하지요. 왜냐고요? 당신이 게임을 투표로 민주적으로 찬성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대화와 타협이 전제되지 않은 그리고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그리고 국민의 공익을 담보하지 않는 법안의 다수결 통과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폭력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이 심야 시간에 이곳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혜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까먹었습니다, 말씀 주셔서.

(「마지막 호소 하고 있다까지……」 하는 의원 있음)

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소급효가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에서 오늘 본회의에 넘어올 뻔했었기 때문에 소급입법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그러나 소급입법을 하지 않는 대신, 2조 조항을 삭제한 대신 오히려 더 누더기법으로, 악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위증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을 추미애라고 하는 국회의원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다 준 거지요.

그러면 무엇이 위증일지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고발을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 새로 신설된 조항에 보면 이것 또한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정답을 아시지 않을까요? 누가 고발될지 누구를 고발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다수결입니다.

현재의 국회는 누가 다수입니까?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분들만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거기서 시원치 않으면 조경식 같은 사람 불러다가 엉뚱한 증언으로 해서 덤터기 씌워서 가족까지 다, 3대를 털 수 있다는 그 장담을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위증과 같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국민께 환기가 되고 정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성주 사드에 우리가 주민들 굉장히, 성주 주민분들 참외, 억울하게 소문을 입혀서 고통당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나중에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2016년입니다—페이스북에 사드 배치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지요.

그 당시에 기억하십니까? 색색깔의 가발을 쓰시고, 파마머리 가발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도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하셔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그 괴담에 동조하는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지요.

참고로 정부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보호기준, 제곱미터당 10W입니다. 인체보호기준의 530분의 1 수준으로 주변 환경이든 인체에든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지요. 한 번 괴담으로 얼룩진 진실을 다시 깨끗이 씻어서 본체를 내보이는 게 이렇게 지난한 과정이 걸립니다.

핵폐수는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1년을 괴담과 싸우느라고…… 결국 과학은 괴담에 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한 번 음모와 선동에 휘둘린 것은 쉽게 정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얹으신 분이 있었어요. 23년입니다. 6월에 이재명 대표가—당시 대표지요—인천 장외 집회에서 가뜩이나 국민이 힘들고 어민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얘기할까 하다가 중립적으로 오염수로 하자라고 될 때여서 상당히 단어 선정에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국민과 생명을 지켜야 되면서도 국민과 생명이 앗아질까 봐 음모론을 더하는 것을 경계할 때였지요.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핵폐수 용어가 더 자주 쓰였습니다. 그 당시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볼까요? 핵폐수 홍보대사 자처하는 현 정권이야말로 국민에게 있으나 마나 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당시 대변인의 브리핑을 볼까요? 핵폐수 방출, 괴담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5단계, 7단계까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용어를 정치적으로 브랜딩을 하고 낙인찍기라고 하지요.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서 공격을 하면 전문가분들이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맞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혹은 침묵하지요. 아니면 소심하게 주변 지인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든지 말이지요.

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용기 내어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이 핵폐수 용어는 맞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말. 이름을 공개하신 용기 있는 분도 있네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학술적으로 본질을 잘 나타내면서 혼돈의 여지가 없는 용어를 약속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자꾸 여기에 다른 색깔을 입히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 행위이다. 소양강댐 물에 똥이 하나 들었다고 해서—예인데 그냥 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강의 댐 물에 똥이 하나 들었다고 해서—그 물을 똥물이라고 할 건지 똥이 얼마나 들어가야 똥물이라는 건지 따져 묻는 의미 없는 수준의 논쟁'이라면서요, 결국 정치적인 낙인찍기가 그만큼 무용함에도 불구하고 파괴력이 있으니 경계하는 이야기였겠지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기사에 나왔으니까 이름을 공개해 드려도 되겠지요, 2년 됐는데.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끝까지 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 교수는 일본이 배출 기준 미만의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다는데 그걸 주변국에서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나, 과학적 본질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신이 없으니 온갖 선동을 위해 있지도 않은 핵폐수 표현까지 가지고 나와 새 프레임을 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네요. 그 당시 한 일간지가 연세대 학술정보원에서 학술지 논문이 있는 걸 검색해 봤는데요. 핵폐수, 즉 'Nuclear Waste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의 저자가 대부분 특정 국가 국민이었습니다. 중국이었네요.

상위 5명 저자가 두안 타오, 무 완쥔, 양 위추안, 리 싱량, 웨이 홍위앤. 1년으로 좁혀도 하오 원펑, 얜 원푸, 궈 시량, 얜 샤오쥔, 메이 도우차오. 중국계 저자 위주로 핵폐수 용어를 사용했다는 기사가 2023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이 꺼내든 핵폐수, 국제 학술지에서는 중국계 용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도 많았습니다. 중국 서남이공대 소속 두안 타오 박사가 저자로 참여한 '위험물질저널' 2022년 1월 호 그리고 이것 보면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았네요.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소속 무 완쥔 박사가 저자로 참여한 '분리정제기술' 이게 다 이 핵폐수라고 불렀던 후쿠시마 오염수 논문입니다. 2022년 6월호에 게재한 논문 역시 국가 핵심 R&D 프로그램, 중국의 재정 지원을 받았네요.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중국 외교부가 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직후에 낸 담화문에서 핵폐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라고 필연

적으로 엮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베트남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전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참여했던 우리 국민들 군대는 어쩌라는 겁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까지 사실 세계의 패권 경쟁이 경제적으로, 안보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특정 국가에, 어느 대륙 세력에 함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행정 수반, 국가 정상에게 요구되는 도의이자 리더십이자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순서는 다음에 드릴 말씀이 다른 게 있었는데 외교 안보가 제시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 기자였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취재했던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이지요. 그리고 그 전에 93년부터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했었으니까 3년간의 경찰 기자 생활을 지나서 96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신한국당 그리고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저는 사실 양당 간의 다른 문화 차이에 조금 의아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한국당은 사실 대통령당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상당히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수직계열화, 즉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대통령의 인선에 따라서 당이 상당히 많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긴밀한 결속력, 좋은 말로 하면 결속력이 있고요 나쁜 말로 하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여러 공과가 있습니다만 취재 기자로 볼 때 의회 정신 이런 것을 저에게 자주 얘기했던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특히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 중에요 전두환과 맞서 싸우시면서 전두환을 닮지 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로 표현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민주화를 외치면서 그 민주화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80년에 야당과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만들었던 특별조치법 그게 지금의 국회증언감정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인을 탄압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국회증감법과 신군부의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놀랍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즉 당초 원안을 보면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상 원칙을 어기고 태어난 법안은 위헌적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법이 닮았다는 것은 두 법을 만든 집단이 서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젊은 시절에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군부를 닮아 갑니다. 김대중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젊은 시절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던졌던 그 많은 짱돌을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한다는 거지요.

말과 삶이 모순되는 것, 물론 부동산을 규제하는 투기꾼, 성추행을 두둔하는 페미니스트,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낸 반미주의자, 일본산 제품을 애용하는 반일 선동가, 저도 조심하고 저희도 조심하고 모두가 조심하겠지만 주로 어느 당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김대중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도 되지 않을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공과가 있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선도 있고. 그러나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반드시 짚는 시도가 있었지요.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서생적 문제의식 그리고 상인적 현실감각이지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동안 육성으로 했던 회고록의 몇 부분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대목도 최근의 상황과 함께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저자가 물어봅니다. '당시 한나라당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피한 일이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입니다. 국회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결국 국정 운영 및 개혁과제 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한나라당이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지도자라면 그러한 사감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나는 취임 직후 한나라당 조순 총재와 회담을 했고 그 이후에 이회창 총재와도 만났습니다. 내 임기 동안 총 여덟 번의 여야 영수회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이 한 것입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함께 영수회담 그리고 여러 야당 지도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읽어 가겠습니다.

영수회담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나고 대화해야 오해한 것이 있으면 풀 수 있고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야 관계 해법은 외교 문제 해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 진심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른 야당과의 공동정부도 물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김종필 총리, 박태준 총리, 이한동 총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민련 출신 그리고 자민련이 추천한 여러 장관과 함께 일했는데 다들 열심히 잘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자민련과의 공동정부 운영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특히 집권 초기 국가부도 위기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공동정부 운영이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내 임기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동정부 함께하는 동안 열심히 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답합니다.

후배 정치인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두 가지 내용을 당부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생적 문제의식 그리고 상인적 현실감각이지요. 둘 중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정치하는 데에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좌표를 잃고 권력만 추구하는 정치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이뤄내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과 전략적 사고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

지요. 또한 이게 없으면 개혁과 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어 가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요. 정치인은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머리, 차가운 가슴이면 안 되겠지요.

둘째, 정치인은 국민의 반보 앞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비전을 실천함에 있어서 항상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을 잘 못하는 정치인은 독선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정치적인 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 실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앞에 있어야 하고 국민과 호흡하면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반보만 앞서 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반보입니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지만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간다면 반보 정도가 되는 거지요. 정치인이 국민과 유리되면 결국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뜻하지 않은 대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워낙 김대중 대통령은 이 책에서 원칙을 중요시하고 원칙을 포기하면서 정치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 가고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유연하면서도 균형감을 갖고 전략적으로 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세계에서는 수학 공식처럼 정형화된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자 또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고록에서 육성으로 남긴 바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함께 갖추는 건 정말 쉽지 않지요. 이게 경제도 또 정치도, 사회 제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가장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의 중요성을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그 당시 들었던 대통령의 강조점이 피력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평소 외교의 중요성을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외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야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4대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외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적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외교가 중요한데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외교에 대한 관심이 적고 외교 역량이 부족하다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탄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적인 감각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찾기가 힘들다. 정말 큰일이다. 나는 후배 정치인들이 찾아오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적인 역량을 갖춘 정치인이 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인 조건이 우리가 비판적인 혹은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도 위기

를 기회로 만드는 능동적인, 창조적인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한반도가 포함된 동북아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의 영향력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일본·러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가운데에 두고 대립하게 되면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됩니다. 이 지역에 이러한 잠재적인 갈등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르자는 말도 아니지만 미국과 소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고 장기적으로도 미국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요.

김대중 대통령의 현실 인식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감각까지 갖출 수 있는 외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패권 경쟁 속에 미국과 중국의 두 겹의 파고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파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파고를 뛰어넘고, 타고 넘을 수 있는 역량과 지혜가 필요한 절체절명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증언·감정법이지만 사실 오늘의 결론은 외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언·감정법은 위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질 때 신뢰가 생깁니다. 그 신뢰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을, 이 법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비례의 원칙과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정파적 시각으로 재단하고 있지만 신뢰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께, 지역구민들께 반드시 입증되고 우리가 그분들께 역량을 보여 줘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게 나라로 번진다면 신뢰로 국익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증감법과 연결돼 있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한 외교안보의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좋든 싫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동안에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일명 기사에서 나오는 주류적 세계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저는 세계관의 주류와 비주류는 학계에서 논의하기 쉬운 편의적인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총칼 없는 전쟁, 침묵의 전장 속에서 얼마나 잘 살아남고 헤쳐 나갈 수 있냐는 거지요.

과거에 미국은 점령군이라거나 일본을 군사적 적성국가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미일 훈련을 할 때 더러운 자위대 군홧발이라고 적개감을 드러냈지요. 그러나 일본과 회담을 재개하면서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조도 저희가 함께할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의 중국에는 두 손 모아 세세, 북한에는 더러워도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초보 정치인인 개그맨 출신의 젤렌스키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물론 잠시 뒤에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정작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로 보도자료와 비슷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도 자칫 과거에 실패했던 노선을 답습하

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대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과거의 북·중·러에 대한 시선에서 나왔던 발언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불식중에 나왔겠습니다만 베트남이 외국 군대와 싸워서 이긴 저력이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베트남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베트남에 가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피를 흘렸던 맹호·청룡·백마 부대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는 조금 거북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국 베트남이 미국 등과 맞서서 싸웠던 통일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했던, 참호를 파고 대나무 숲 뒤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그분들에 상찬이었겠습니다만 그 덕담도 때와 장소가 구별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외교도 타이밍이지요, 정치가 타이밍인 것처럼.

그러나 조금 더 대통령에 절제를 호소합니다. 국무회의를 보면 반중 시위가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양상을 보인다고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측 항의에 대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또 애써 한국을 찾아온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그래도 치안을 지켜 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혐오 시위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지요. 민노총, 대진연이 성조기를 찢고 평택·군산·성주·부산의 미군기지, 심지어 뉴욕까지 원정 가서 반미 시위를 벌인 데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익형량처럼 외교 문제는 반드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는 지나친 쏠림은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비쳐진다고 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모양새에도 신경 써야 되는 게 불편하고 살필 게 많은 국정 지도자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이제 외교의 가장 최전선에서 불꽃이 튀고 있는 관세 협상은 어떻겠습니까? 나날이 들어오는 소식은 우울합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국민들은 낙담을 안고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물론 각자의 일정이 있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사리 잡히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금 만나 봐야 뭐 하겠냐라는 말을 기자에게 했다던데 지금일수록 만나야지요. 1분일수록 만나야지요. 이같이 지금도 자동차 업계가, 부품 업계가 그리고 품목 관세까지 두들겨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울상의 반도체 업체가, 의약품 관세 100%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뒤에 대고 얘기할 때 단 1분이라도 정상 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관세 협상에 나라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법은 그렇게 많은데 왜 외교에서는 대한민국 구하기 외교는 없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은 특히 국제 대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주최국 정상이 주재하는 만찬은 세계 각국의 정상이 만찬이 주는 성격상 그 주최 측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스몰토크라고 하는, 외교를 떠나서 상호 편안한 분위기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이벤트입니다. 그 만찬에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일한 시각에 보통 외교부에서 정상이 오면 미국 한국전문가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미국인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한국인과 더 가까울 수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자리에 갔지요.

아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때 멜라니아 여사가 자리하는 의자 옆에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대한민국 영부인을 위한 의자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보통은 순번상 정상들이 연설을 할 때 너무 길어지거나 짧으면 가끔씩 순서가 조율이 될 때가 있기도 하는데 우연히도 아마 멜라니아 여사 곁의 의자는 김혜경 여사 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 간의 회담만큼이나 여사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의외의 얼음이 녹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시간을 놓쳤지요. 아마 관세 협상에 상호 간에 진전이 있을 만한 세 번의 계기가 있었다면 그 두 번은 날아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은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아마 저희가 통화 스와프를 얘기하고자 했겠지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80%가 넘습니다. 우리가 아마 4100억 정도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정상회담 때, 그 이후에 정책실장을 포함한 수석급 인사들의 백브리핑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책수석을 통해서 또는 출국 전 브리핑을 통해서 3500억 달러는 대출 그리고 보증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팁을 기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두가 철석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엔을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말은 '3500억 불은 선불이다'였습니다. 즉 현금이라는 거지요. 현금으로 다 내놓으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접점을 마련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외교란 합의하지 않은 것을 합의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로의 합의를 존중하는 아주 독특한 분야입니다. 자신의 국민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일전을 벌입니다. 내게 총과 칼과 무기만 없을 뿐이지요.

말씀드린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 우리 측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발언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외환보유액이 지금 7월 기점으로 하면 411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00억 달러는 한 85% 정도 되겠네요.

유엔총회에 참석한 대통령이 재무장관을 만난 건 특히 한미 협상의 교착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갈등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에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대미 투자 수익을 한국은 1, 미국은 9의 비율로 나눌 것을 요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뒤늦게 알려진 게 아닙니다.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타결 당시에 그때 김용범 실장은 3500억 달러를 차관, 보증, 일부

투자로 예상한다, 그런 내용을 비망록에 적어 뒀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그때부터 9 대 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대출 혹은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미국의 비망록과 우리의 비망록은 다른 겁니까? 같은 대화 두 노트인가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않았는지 이건 심각하게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차관, 보증, 일부 투자로 예상하고 비망록에 적어 뒀지만 미국이 이후 보낸 양해각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 정말 이게 사실이었다면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 달라, 절대 그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무슨 꿍꿍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흑막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미국이 현금 요구로 말을 바꿨다고 하지만 자꾸 대장동 식으로 외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대장동 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이 환수조항을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당시의 이재명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장동은 이 환수조항 삭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크게 사회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은 내가 아닌 실무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내 정치 때는 그게 통하셨을 겁니다. 특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그 정도 순발력은 주민들께서 다른 지역화폐 또 다른 지역활동 보시면서 일이 많아서 여유 있게 아량 있게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주민분들의 피눈물은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울컥하지만 외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는 성남시장 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외교는 경기도지사 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이 자꾸 보이고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보십시오. 한미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대변인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협상문을 작성하지 않을 정도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변인 본인이 혼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실제 정상회담에 대변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수석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에 참석했다면 더더욱 그 같은 분위기가 진실이었든 아니었든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대변인의 의무이지요. 그게 아니면 대변인을 하면 안 되고요. 자기 말을 하는 대변인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변인의 말은 곧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걸 하라고 그만큼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인 걸로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뭔가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낌새가 수군수군 국민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시작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했다면 IMF 수준의 위기가 왔을 것, 내가 탄핵당했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다른 사람입니까? 왜 불리하면 남 탓을 하고 공은 내 공으로 돌리는 성남시장 때 버릇을 그대로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미친 잭 스미스를 얘기하면서 특검이 강압적 수사를 하고 있는지 물으니까 나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처럼 '제가 통제하고 있지는 않지만'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통령이 전 언론이 보는 앞에서 관봉권 띠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것을 본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여기 있었네요.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

를 전액 현금 투자하면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파기냐라는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과 관련해서 투자를 유보하는 의미의 발언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외교는, 떠나간 물은 거스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신과 함께 떠내려가기 때문이지요. 원래 기업에 계신 분들이 레스 프라미스 모어 퍼포먼스(Less promise, More performance)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조금만 하고 성과를 많이 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보다는 그 행동의 무게감 때문에 그 기업에 신뢰가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즉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 말은 장광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못 믿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지요.

기억하십니까?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는 제가 아까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올 때와 들어올 때가 따로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요. 말을 해야 될 사람과 말을 숨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참석하고 나서야 하는 그 세 가지 요소에, 정상회담에 비서실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공을 대통령에게, 과는 외교 직업공무원들이 감당하고 끌고 갑니다.

비서실장은 그 막중한 국정 현안에서 대통령과 국내 상황을 조율하면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처해 있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한다는 비서실장이, 그 핫라인이 조지아 사태에서는 그 어떠한 통화음도 들리지 않자 사람들은 비서실장의 지방선거행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몸은 대통령실에 있어도 마음은 지방에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을 쓰지만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입으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지만 나의 시선은 지방선거에 가 있다면 국정운영이 착실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신속 해결, 총력 대응, 사실은 대통령의 조지아 사태에 대한 입장은 당연하겠지만 공허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비서실장 핫라인도 가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교란 사실은 질문을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면 답변이 엉뚱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나도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화답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틀리면 나중에 정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미국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질문은 '내가 당신과 함께 중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동반자적 입장이 아니라 지금 한창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특사로 가 있는 전승절, 그 중국, '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굳이 중국을 가시겠다면 그 전에 미국과 앞으로 함께할지 중국과 함께할지 당신의 안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라고 하는 우회적인 질문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겹겹이 복선이 깔려 있는 많은 질문이 사실은 그 단순해 보이는 화기애애한 한미정상회담 모두에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용산에서의 혹은 더 밑으로 내려와서 평택에서의 소유지, 그게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미국은 거기서 무엇을 더 하고 싶었을까요? 중국과 대만의 남중국해에서 있을지 모르는 전쟁, 즉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외교장관 회담 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 외교장관만 우리 식으로 바꿔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웃음 뒤에 등 돌리고 떠나간 그 나라의 외교관과 정상이 하는 일들은 각국의 대사관에 의해서 속속들이 보고받고 보고됩니다.

언행일치,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남들에게…… 내가 잠시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반듯하고 누군가에 진실한 사람으로 남기 위한 연대의 첫걸음이 언행일치입니다. 세 살배기 어린애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려고 우리 부모님들은 노력합니다. 하물며 나라의 이익이 첨예하게 걸려 있는 외교 전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뿌려졌던 사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을 이렇게 두 손으로 짚고 옆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굉장히 힘 있게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기서 얘기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볼펜 선물도 주셨고 위용의 사진도 홍보를 하셨는데 저는 아쉬움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3500억 불을 현금으로 요구했다면, 또는 그 전이라도 관세협상 그 자리에서 전문직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시적인 근무를 투자 사업으로 간주하는 그 정도 보완 장치는 마련하고 귀국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당한 상처와 수모가 조지아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아마 그럴 겁니다, 법대로 했다고. 법대로 한 게 맞지요.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무부 같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아마 일정 정도의, 그 사람이 아시안이냐 아니면 라틴이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구금이나 아니면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태를 그렇게 될 거라고 몰랐다면 무지이고 알았다면 배임이지요. 물론 앞으로도 배임죄는 폐지한다고 하시니까, 배임은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결정적인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비자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미국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볼펜 선물과 위용의 사진 같은 미국이 느꼈던 앙금 있는 뒷감정은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러 갈 때 대한민국에서는,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이 파헤치겠습니다만 방송사 팔 비틀어서 전승절 전 과정을 생중계로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토에는 가지 않고 전승절에 참석해서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전승절을 생중계하는 것은 이 정부가 몸은 미국과 함께 있지만 시선은 어디다 두는지 정확하게 보여 주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런 거 편성하라고 방송3법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편성위원회에서 기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부 입맛대로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그램 색깔 규정하고, 프로그램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정하는 이 같은 상황 머지않았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투자 펀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신문 지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국회증언감정법과 무슨 문제냐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입법과 사법, 행정, 온전한 삼권분립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 법치주의는 내가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내가 내 자연권을, 자연적인 권리를 국가에 양보하면서 대신 얻을 수 있는 생명과 재산, 안전을 국가가 책임질 거라는 그 기대하에 홉스의 사회계약론도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감당하는 부담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안보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익 90% 확보 주장과 관련해서 몇몇 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샴페인이라는 말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패권입니다. 민주주의도 그리고 미국 주도의 국제 정세도 트럼프 1기와 완연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아십니까?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기득권 노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88%,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애·억울함·박탈감 이것까지 정책으로 아마 흡수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박탈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의 전반적인 흡수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대 노총이 보내는 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난 70여 년간 성장의 그늘 밑에서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이름 모를 노동자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힘들어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노력 속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권리를 함께 회복하면서…… 그러나 기득권 노조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막아서는 노란봉투법의 최전선에 선 것은 반드시 후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의의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다는 정책, 결과를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처럼, 1기와 2기 눈 깜짝할 사이에 트럼프는 변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여전히 북·중·러 또는 미 제국주의, '양키 고 홈'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대표가 '양키 고 홈'이라는 주장을 했었고 다시 미국 제국주의라는 그런 시각이 나왔을 때, 몇 년 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반미 감정으로 위기를, 기회를 넘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출국 전에 외국 군대 그리고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떠나기 무섭게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인사들의 미국에 대한 거친 발언을 들었습니다. 시위도 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반미 몰이 하면 우리 정부의 과가 가려집니까? 그렇게 연막을 터트리면 우리 정부의 실책이 흐트러집니까? 그렇게 비산해서 흩어지면 안 보이실 줄 아십니까? 이제 국민은 그런 것 다 아십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의 2025년 외교 전쟁을 그 80년 학생운동의 최전선으로 몰아넣고 퇴행하는 겁니까?

펀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자동차관세는 25%입니다. 일본은 15%지요.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기자가 묻자 대통령실 대변인은 '25%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자동차업계는 밀어내기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둬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두고 '관세 25%에도 끄떡없다' 이런 식의 허울 좋은 낙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에 촉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밀어내기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품 업체들이 원가 삭감하면서 정말 남모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인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가 아직 실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일본은 원래 2.5%였기 때문에 15%면 12.5%지요. 그러면 우리는 25%니까 정확히 두 배인 셈인 겁니다, 편차만 보면요.

자동차시장을 내준 대신에 이재명 정부는 쌀시장을 지켰다고 설명하던데요, 쌀시장 진짜 지킨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가장 잘 쓰는 소셜 트루스, 트

루스 소셜이라고 하지요. SNS에 '컴플리틀리 오픈 더 트레이드(completely open the trade)'라고 합니까? 그래서 쌀시장, 즉 농업과 관련한 시장을 완벽하게 개방했다라고 한미정상회담 후에 SNS에 남겼지요. 한미정상회담 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미정상 후에는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구글과 같은 그런 기업을 대신해서 중국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SNS를 남겼지요. 그 전에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이 같은 쌀시장에 대한 입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에 밝혔고요.

그때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쌀에 대해서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변인이 얘기했던 브리핑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저처럼 정면을 보고 얘기하지 않고 원고를 이렇게 읽더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변인이 쓴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상사로부터, 대통령 혹은…… 지금은 재무부장관이 관세협상의 주무라기보다는 사실은 산자부장관의 카운트파트가 관세협상을 주도하고 있지요,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그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이 적어 주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정부가 왜 미국과 점점 다른 말을 하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농산물 개방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강유정 대변인이 일부 과채류의 검역 절차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검역을 하면서 시간을 잡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 시간을 대폭 단축해서 들어오는 거의 즉시 우리나라에 풀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3500억이면 약 500조, 요즘 계속 원화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1400원을 뚫었었지요. 487조 정도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80%가 될 수 있는 그 현금을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로 국민의 불안감을 또는 예측 불가능한 우려를 더해 주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안 좋은 악재입니다.

제발 말씀 좀…… 지난 7월 말에 관세협상 발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협상이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를 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합의가 없어도 구두합의가 충분히 견고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일간신문의 1면에, 그런데 미국이 보낸 양해각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것이었음을 밝혀 주는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내면서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얄밉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으로 많이 돌렸거든요. 그리고 차 부품 관세를 15%로 내렸지요.

심지어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3500억 달러 이상 플러스알파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압박에 따라서 더 내기 전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측에서 들리는 말은 미국에 대한 불만입니다.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러트닉 장관이나 제이미슨 그리어, USTR이지요,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회담하면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기초 경제 체력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제가 미국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니, 현금이 없다

면서 국민들한테 15만 원씩, 25만 원씩 30조는 언제 그렇게 펑펑 잘 쓰세요? 추경 보니까 다 현금이던데 돈 많은 곳 아니에요? 그 돈 많으시면서 왜 이렇게 없다고 그렇게 코스프레 하세요?' 그렇게 미국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외교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볼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함께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한국에 양보하는 모양새가 되면 미국의 요구에 불만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이탈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중국이 버틴 것 한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서는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다만 중국은 배터리 그리고 전기자동차 그리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기초 원료의 보유국이기 때문에 버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웨이를 미국이 막는다고 해도, 본인들이 산업스파이를 보내든 아니면 다른 인재를 웃돈 주고 얹어서 빼 오든 해내는 겁니다, 7나노 휴대폰까지.

중국이 굴기를 이야기하면서 화평도 하겠지만 이제는 굴기로 하면서…… 예전에 볼펜 심에 있었던 스프링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조업의 중국이 이제는 첨단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거지요. 산업스파이로 인했든 아니면 자신들의 노력이든 아니면 자신들이 인재를 빼 오든 중국은 그만큼의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못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서 하시면, 그 현실적인 중도 실용외교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후보 시절 '트럼프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외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만찬에 가셨어야지요. 그러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만나면 뭐 해'라고 하는 대통령실 언급이 나오지 않게 하셨어야지요.

이제부터 우리가 대비해야 될 여러 품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새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품목은 중대형 트럭, 25%지요. 의약품은 100%입니다. 주방 수납장 및 욕실 세면대 50%, 가구 완제품 30% 등입니다. 의약품이 치명적이지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 규모가 39억 7000만 달러, 5조 6000억 원에 달하니까 말이지요. 이제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우려해야 되는 처지면 또 한번 궁금해지고 걱정됩니다. 또 말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약속했다고.

7월 말에, 기억하시겠습니다. 한미관세협상에서 의약품·반도체 부문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구두로 합의했다. 웬만한 협상에서는, 심지어 정상회담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국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라도 배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국익이 걸려 있는 그 관세협상 합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까지 최혜국 대우라는데 구두 합의입니다. 팩트시트가 없는 협상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단어를 자체적으로 아전인수 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퉁명스럽더라도 보도자료라도 내서 각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서 자국민에게 그리고 상대 국민을 향한 협상에 윤활유를 돋고자 하는 것이 팩트시트입니다. 그러니 과연 최혜국 대우가 될까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일본은 의약품·반도체 관세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것으

로 했지요. 이제 관세 전선이 저희가 자동차를 넘어서 반도체, 핵심 광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와 국내 생산 반도체 비율을 1 대 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 GDP로 비교하고 환산해 보면 우리가 GDP 대비 13.1% 수준입니다. EU 투자 규모가 GDP 대비 6.9%, 일본은 13% 정도 되지요. 대미 투자액을 GDP 대비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농산물의 추가 개방 이 부분에 대한, 과연 3500억 불이 현금이었으면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이런 것까지 약속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흑자 규모가 우리가 660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이 685억 달러였으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 직접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린필드라고 하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현지 공장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래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그린필드, 직접 공장을 짓고 투자한 게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나라 중 1위였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틀리지 않다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일이 위 수위에 올라갈 정도로 사실은 고용에 있어서는 효자 국가였지요. 그러니 조지아에서 당한 우리 국민의 수모가, 우리 국민이 당했던 그 고통이 더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투자 금액을 아까 제가 얄밉게 금융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대출과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달리 미국이 투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밝힌 게 더 우려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루스 소셜, SNS인데요. 이 SNS에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쓰지 않고 혹시 밑의 참모분들이 대신 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미국 측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거기 나오는 대문자,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퍼저리(perjury)라는 말이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무역이든 아니면 관세든 트럼프 대통령이 대문자로 쓰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자는 직접 챙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화당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아지는 거지요. 식자우환입니다.

트루스 소셜에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오운드 앤 컨트롤드 바이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고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 셀렉티드 바이 마이셀프(selected by myself)에 대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 조금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일본이 내 지시에 따라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FTA 수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특히 FTA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이 자동차여서 더 큰 아픔으로 남지만 돌파를 해야지요.

그리고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 부분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협조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원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AI가 원전을……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지요. 왜냐하면 AI에는 그만큼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그 산업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그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양질의 에너지 공급은 원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취임식 때

자신의 뒤에 세웠던 것은 대통령실, 즉 백악관 참모나 장관이 아니라 기업인이었습니다. 그것도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구글, 애플 그리고 많은 SNS 기업들이 함께 했지요. 그런데 그 기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00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길 보면요 시가총액 10개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평균, 매일 달라지지만 AI 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한 기업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본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요. 세계의 돈의 흐름은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AI 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하면서—메타까지 마찬가지지요—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2호기 다시 가동하는 것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SMR 15년, 원전 기술은 15년의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까? 물론 15년도 SMR 기술까지 7년이면 지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왜 갑자기 15년이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SMR 기술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의원님들 그분 오셨을 때 함께 가서 사진 찍으셨지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물론 이곳에 와서 백신을 포함한 여러 가지 ODA를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SMR 기술입니다. SFR이라고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소듐 냉각 기술입니다. 그것은 SMR에서 보통 우리가 원자로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을 섞거나 아니면 다른 재료를 넣는데 이것은 소듐으로 원자로를 냉각하는 취지의 기술을 빌 게이츠의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본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자로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술을 투자한 거지요. 그런데 그 SFR 소듐 냉각 기술을, 지난해에 우리 정부에서 R&D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R&D 예산 90%를 민주당이 깎으셨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적이 아니고 원전은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린 성장 동력입니다.

빌 게이츠와 사진 찍으면 뭐 하십니까? 그때 가득히 빼곡히 온 여야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서 '원전 예산 우리가 90% 깎았습니다'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가는 세계에 우리가 그 길에 올라타지는 못할망정 이탈하지는 말아야지요.

지금 환경부장관으로 가신 의원님도 차세대 원자로 사전제작, 법으로 막으려 하셨지요? 물론 통과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산업이든 규제하는 부서와 장려하는 부서가 같이 있으면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반대한 겁니다.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었고, 함께 대화할 수 있었고, 정부조직법에 이번에 민주당의 안 중에서도 저희가 평가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하면 원전 하겠습니까? 여기서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미국 쪽에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우—트럼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우리에게 했던 경고가 있습

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모두 만족시키려 한다면 동맹 전체를 약화시킬 것’,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짓가랑이 사이를 기어가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외교란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증감법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신뢰 자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좋은 점수가 한미 간에 형성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입니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라는 고난도 테스트가 던져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요. 따지고 보면 국방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주한미군 없이 자력으로 북한 위협에 맞설 수 없느냐라고 질타한 셈입니다.

제가 아까 대장동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쉽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대통령님 보좌를 잘 안 해 주시나요? 그냥 혼자 뛰게 하시나요? 지금 대통령의 언급, 특히 엉겁결에 나오는 언급을 보면 예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주민들을 만나서 했던 그 정도 수준의 인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보다 각 부처에서 대통령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자주국방은 자주 군대 역량뿐만 아니라 외부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총체적인 안보 역량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작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작권에 대해서 이것을 이념의 무기로 활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협상이 안 되면 반미 몰이로 나의 과를 감추고 싶은 연막탄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마주한 외교·안보 상황이 절체절명인 겁니다. 집단안보, 다자안보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나누는 거지요.

자, 봅시다. 우리가 전략자산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이라도 우리나라 해역 근처에 오게 될 때 미국이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응수하다가 자국 국민의 피해가 있을 텐데 그것 왜 해 주겠습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되면서 이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동맹이 돼 버린 게 아쉽고 어려운 관문이기는 하나 그래도 글로벌 안보 위협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안보의 실천은 이루어져야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얘기하다가 자주국방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다, 자주국방 필요성 강조하신 것도 예전에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혼선의 입장 뒤로 민주당 의원들은 대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미국 대사관으로 갔지요.

저희가 쌀과 소고기가 굉장히 민감한 현안입니다. 저희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분들께 많이 혼났습니다. ‘너희들은 여당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 때 우리와 함께하는 척하는 거냐, 진심이냐?’, 저희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감사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루과이 라운드랑 WTO 체제였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양보가 불가피

했습니다. 피해 농산물 또 피해 농가 지원에 상당히 많은 정부의 역량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농업 구조조정에도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됐지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헤치자고 특용작물, 특산품 등장하고 적지 않은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듯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 소고기 추가 개방 요구가 안 된다. 여기 가신 의원님들이 계시나요? 얼핏 안 보이는데…… 미국의 이런 행패는 깡패다, 트럼프 깡패 짓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신제국주의…… 이게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지역구 사정을 알겠습니다. 절박감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이시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의 책임을 지시라고 여당이 되신 겁니다.

반미 단체 집회에서 나오는 그런 구호들 책임 있게 국정 운영하시라고 여당으로서 힘을 국민들께서 실어 드린 것이고 그 책임만큼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식량 주권을 짓밟고 농민 생존권을 뺏기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 헌법 46조를 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입니다.

3500억 불을, 이게 국내에서 불붙듯 이는 그런 국민들의 반감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앞세우시면 동티 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뇌송송 구멍탁 그 사진을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잘못되면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제시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약간 블랙코미디지요. 왜냐하면 뇌송송 구멍탁에 민주당과 함께하는 의원님들도 나서서 하시고 이제는 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커피 같지 않나요? 형용모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염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미 감정을 해 봤자 낡은 구호, 낡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자본에는 이념도 진영도 양 날개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서늘하고 치열한 국익 확보 전쟁만 있을 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기고 어떤 때는 기고만장하게 해야 되는 게 외교인 것입니다. 무조건 과거 45년 전 식의 사고로 점철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심산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순간 둘 다 어렵게 됩니다. 잠시 뒤에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보충해 드리고자 합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요구,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파산시키려는가'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논평입니다. 소개를 좀 해 드릴까요?

한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논의했던 35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투자 방식도 대출 아닌 현금을 먼저 투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

다음 단어가 좀 세서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낸 논평입니다. 미국이 안보 동맹국이자 경제 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힐난했습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오랜만에 들리시지요? 이치에 닿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얼마로 확정되든 직접투자는 5% 미만으로 하고 대출과 보증 방식으로 이행해서 외화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미국 정부의 주장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 직접투자 방식으로 이행한다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곧장 바닥을 드러내 국제통화기금의 힘을 빌려야 하는 제2의 외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맞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직접투자 방식으로 하면 우리 외환보유고는 곧장 바닥을 드러내지요. 단 외환보유고로 끌어낼 때 그렇게 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왜 다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릴까요? 그것은 관세 협상이 벌써 7월에 타결됐다고 하지만, 또 8월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하지만 이미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서 관세 협상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할 때 상대, 즉 적진의 카드가 무엇인지 달려갔던 정부의 협상팀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신 분, 그분들이 어느 당인지 아시지요?

물론 정쟁과 그리고 서로의 진영에 따른 긴장과 견제를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정쟁은 국경선을 넘지 않습니다. 국경선에서 정쟁은 멈춰야 합니다. 정치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니까 말이지요.

제가 수출입은행이나 아니면 산업은행, 무역보증을 하는 그리고 다른 기금들을 한번 알아보니까 깜깜무소식입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도 못 하고 있고 통보를 받은 것도 미약하고 이 정부는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털어 내라고요?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지금 1400원 때문에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환율은 더 치솟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강등이 불 보듯 뻔하고요. IMF 때 겪었습니다만 기업사냥꾼은 어떻습니까? 헐값에 사려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은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까요? 아니, 누구에게 찔리게 될까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정부가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손쓸지 모른다는 당혹스러움이 여러 경제 부처와 산하기관을 통해 감지가 됩니다.

이럴 때 야당은 사실 손쉽습니다. 비판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돕겠다고 했고 관세 협상이든 역량 있는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 위기는 함께 극복해야 되니 그래서 대화하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증감법도 서로의 논의가 더 필요하고 정부조직법도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평가해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 보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행안위가 기재위가 법사위가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다고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환보유고를 헐면 안 되지요. 혹시 외환보유고를 헐기 위해서 통화스와프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준기축통화국에 다름없는 일본 그리고 프랑스와 다릅니다. 프랑스 국가부채 GDP의 110% 넘게 펑펑 써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런 프랑스도 감당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GDP 대비 아직 여력이 있다면서 60% 가려면 꽤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달리면 된다. 그러면 2060년, 우리가 100%를 넘어갈 그날에 어쩌시려고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더민주혁신회의 발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게 되고 한국 국민은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다시 겪게 된다. 절대 오지 말아야 할 끔찍한 미래.

국토위인 저한테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게 된다 물어보시면 여기서 한 열 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자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 집을 못 사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기가 막히게 본능이 발달해서 알토란 같은 땅만 사들이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부동산이 헐값에 팔리게 된다고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현지에서 대출을 받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현금을 싸 들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하고 세원 조사를 하느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리 역량도 그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라는 게 적용되기가 참 어렵지요, 부동산 같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 6개월이라도 거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게 한다든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안 들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봤습니다. 왕 서방이 땅을 펑펑 사들이고 있다라는 제호의 기사가 나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몇 개 내놨더군요. 제가 그걸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왕 서방에게 우리 영토가 침략당하고 있다 그런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것 그런 것보다—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 자극적인 현실이지요—보다 항구적이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원합니다.

그러면 뭐로 해야겠습니까? 바로 증감법이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해외 외국인들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상호주의에 준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시고 토론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의 급한 민생이 있는데, 지금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은 청년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정책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데 이번에 규제로 6억 그리고 정책대출 막아 놨습니다. 한도를 줄였지요.

터놓고 얘기를 해 보시지요. 강남·서초·송파 6억 대출받아서 집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른바 속칭 현금 몰빵이라고 하는 현금 부자들만 요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를 해 놓고……

요즘 기사 보셨지요? 강남·서초·송파에서 마용성, 마포·용산·성동까지 그나마 내가 사고 싶은 데, 갖고 싶은 데, 살고 싶은 데, 살고자 하는 곳에 사고 싶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 그런데 여기 LH가 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사라라고 하는 건…… 우리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에게 길을 터 주는 것 함께 병행돼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부동산 얘기하니까 외국자본, 중국인들이 우리 알토란 같은 땅을 사들이시니까 제가 잠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13번 장표를 보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금융 규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공급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수요는 어디서든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도 공급해라, 공급해라 하니까 9월 7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아나바다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굉장히 신재생, 재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 1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책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LH 직접 시행해서 7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LH 직접 시행을 하지요. 이번에는 민간에 토지를 팔아서 LH가 땅장사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LH 직접 시행을 늘린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공택지 확보 필요하지요. 다만 숫자만 좀 갈아 꼈네요. 26만 호에서 37.2만 호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 6000호 공급인데 이게 사실 일몰이 되면서 실패로 돌아간 사업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주민분들과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과 굉장히 큰 충돌과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이곳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사업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공공에서 들고 오는 카드는 사업성은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사세요'라고 하는, 주민분들의 자율의지와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내놨기 때문에 표류하는 사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지금 수십 개 중에서 착공하는 곳이 제 기억엔 한두 곳, 적어도 서너 곳을 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소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일몰이 됐는데 연장하느냐 문제를 놓고 상당히 오랜 시간의 논쟁이 벌어졌던 사업입니다. 이미 일몰은 다가오는데 더 이상 일몰을 해지하고 새롭게 하거나 연장할 만한 그런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거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주민 한 분이라도 요청이 있으면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의 사정인 거는 아는데 그 사정도 지역구 구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적정 규모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만 그 실패한 사업을 이번에 또 베꼈습니다. 앞뒤만 바꿨지요. 주택이라는 말을 뺐구나. 그래서 데칼코마니의 부동산 정책은, 저는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다 보면서도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날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날 브리핑에 뭐 기재부장관, 국토부장관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부동산, LH까지 모두 한데 모여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듯 보였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맨 마지막에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LH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라고 아마 비스듬하게 답을 비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시지만 분양가상한제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그만큼 그 안에 원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까지 저희가 다 체크하면서 보면 이게 전폭적으로 LH가 주는 분양가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답을 흐렸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들었던 건 얼마나 저렴하게, 내가 그나마 한 채라도 살고 싶고 갖고 싶어서 신청했던 LH주택의 분양가도 이렇게 야심 차게 발표하면서 모른다? 공공이라고 하면서 공공의 가장 최적화된 홍보를 못 한다? 그건 분양가가 의문이 있는 거지요. 제발 그 분양가 조속히 결정하셔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요즘 청약하시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 가지는 소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금융규제로 오히려 전세보다 월세로 더 몰려가는 서민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전세가 가진 것은, 월세로 살다가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위해서 사다리처럼 가슴에 품고 있던 게 전세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금융규제로 매물이 사라지고 오히려 현금 부자, 또 상속·증여로 격세증여 해서 '내 새끼만큼은 아파트 줄게'라고 하는 자산가, 재력가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 청년들과 집이 없는 서민은 더더욱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라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셔서 저렴한 분양가 세일즈하셨어야지요. 왜 대장동처럼 분양가를 얘기 안 하면서 의문만 증폭하게 하십니까? 제 의심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를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외교를 정치에 활용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혹은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더민주혁신회의의 논평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국·일본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의 통화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단일대오로 한국 국민의 경제주권을 지켜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의 네 번째 집권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천을 받으셨네요. 더불어민주당 계파 모임 중 최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시는 분들일수록 외교가 우리의 역량 부족으로 삐끗하면 남 탓 돌리는 국내 정치를 상대국이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는 게 대사관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논평, 성명,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은 '나는 몰랐는데 의원들이 고생하니까 힘내라고 논평을 냈겠지' 이런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모른 척하는 노림수는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의원 차원에서도 '3500억 달러 동맹이 아니라 협박이다. 전 국민 일인당 1000만 원의 빚을 지게 하는 거다', 이런 빚 얘기 감사합니다.

지금 GDP의 49.1%, 50%를 향해서 국가부채가 달려가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2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금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납부하는 관세, 전문직 비자 수수료, 동맹국가 간의 동등한 협상 조건이 아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당답게…… 이제 민주당분들은 야당이 아니시잖아요. 다 가지셨잖아요. 입법·행정·사법 거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대법관을 늘리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

자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전역에 있는,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네가 미국을 부정하는구나'라는 정도의 막말까지 들으면서 대법관을 늘리는 본인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대법관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늘리는 데에는 사람들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진행할 줄 알았거든요. 워낙 격렬한, 그 당시에도 본인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유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사법부 장악은 국부를 일구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기회를 주고 노력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그 성과의 과실을 나눠 주고 일하면 길이 있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나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공정한 세상을 구가하는 곳에서는 그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베스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4만 5000건 넘는 재판 중에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한, 정원이 늘어난 대법관들은 정권에 따갑거나 정권과 반하는 판결을 단 한 건도 안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비극이지요. 김민석 총리가 대정부질문 중에 이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하시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답을 안 하신 거지요.

김민석 총리의 형이자 지난 이른바 빛의 혁명을 이끌어 오셨다는 김민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단 한 치도 '설마' 또는 '아닐 거야'는 없어야 합니다. 백인 제국주의자들과 제국주의 국가는 잔혹하기 짝이 없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아 왔고 이는 여전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겪은 나라가 그 인종적 차이만 있지 이토록 서구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입니다—오랜만에 듣습니다—제국 미국은 지금 황혼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락하고 있는 제국과 운명을 같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 나라가 금과옥조처럼 섬기는 이른바 한미동맹은—진짜요? 금과옥조처럼 섬기세요—제국주의의 아가리에……

저의 말이 아닙니다. 김민웅 대표의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옮겨서 설사 좀 거친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금과옥조처럼 섬기는 이른바 한미동맹은 제국주의의 아가리에 우리를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 양키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합시다.

미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제국주의의 지배에 굴종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한미동맹의 굴종적 관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해서 미국이 놓으려는 체스 판의 말이 되어야 합니까.

한미동맹은 우리의 목에 건 족쇄입니다. 이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 주는 동맹이 아니라 우리를 전쟁터에 끌고 가려는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도 이런 미국과 싸운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과 정신적 연대를 해야 합니다. 스콧 니어링과 같은 분, 노암 촘스키와 같은 분들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양키 제국주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판자본 얘기를 들어 본 지가 참 꽤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이 같은 삶의 길에서 서 있던 분이니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글이 나오면 미국의 시선은 과거 반미 운동을 했던 김민웅 대표의 동생 김민석 총리를 쳐다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에 잘하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MAGA) 운동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 지지층의 요구는 굉장히 강렬하고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기독교 교계의 목소리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고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고 하는 석유, 즉 이제 미국이 과거의 수출국으로서의 명성을 드높이자라고 하는 석유 업계의 목소리가 있고 또한 원전이나 AI, 특히 원전을 통해서 AI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메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까지 기여해 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강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이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까지지요. 물론 정치인은 선거에서 누군가에게 늘 마음의 빚을 지고 누군가의 마음의 지원을 받으면서 항상 갚을 수 없는 부채의식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채의식이 제가 아까 헌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 길에서 이탈해야 된다면 때로는 오히려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들을 나라를 위한 집권 여당의 길에 이끌도록 하는 것도 리더의 책임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고생했지요. 강정마을 그리고 한미 FTA, 지지자들이 보면 선뜻 찬성하기 어려운 것을 저는 나라를 위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외로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득권 노조, 즉 젊은이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득권 노조의 청구서에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하청으로부터 시달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노란봉투법 6개월 뒤에 시행이니 지금 아직 먼 일이라고요? 정책실장의 말처럼,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전문가이니 노동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노란봉투법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작용과 여러 경과를 살펴보면서 그때 적응하면서 바꾸자고요? 이미 산업계는 마비입니다. 민노총 산하 조직원을 함께 고용하지 않으면 또는 함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상처와 후과는 벌써부터 마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에는 양심도 국적도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저는 쌍용차 노조원들도 무지막지한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서 눈물 속에 동지들에게 한 푼, 두 푼 자신들의 돈을 노란봉투에 담았던 그 사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느꼈던 청천벽력 같은 마음도 제가 헤아릴 것 같습니다, 다는 못 하겠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저는 기업과 노동자가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업의 노조가 아닌 산별노

조에 힘을 더 실어 주는 노란봉투법이라면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지요. 첫째, 대응하지 않는다. 무대응으로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줄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장을 이전한다. 여기서 노동의 경직성, 고용의 경직성 그리고 유연하지 않은 계약관계 때문에 기업들은 골머리 앓다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겠지요, 마치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쪽으로 타진하는 것처럼. 또 다른 선택이 있다면 자본 이탈일 것입니다. 공장 이전과 자본 이탈까지 걱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사정이겠으나 그 기업 한 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부디 헤아려서 기업은 악덕 고용주고 노동자는 선한 희생자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부디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지자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같은 김민웅 대표, 김민석 총리만큼이나 이 정부 탄생의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웅 대표의 페이스북은 충분히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게 지난하겠지만 그 작업도 저는 고통스럽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청구서와 그리고 어음에 둘러싸여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는 듯한 혹은 갑갑해서 혼자 원맨 플레이를 하는 듯한 모습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외국 군대의 지원이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XX입니까?’ 이거 2016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국하기 전에 나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국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교 전장에서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은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 혹은 그 일정을 소화하느냐 중간에 나가느냐 그 자체가 파트너들에게 외교적 함의를 품고 있다고 해석하게 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 순차 통역 하시는데도 그냥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 계시고 기다리시면서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은 대통령은 안 보이고 대통령의 메시지만 이상하게 허공에 둥둥 뜨는 기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결례라고 하지요.

예전에 방송 인터뷰를 하셨다가 당선 인터뷰 시절에 이어폰을 빼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 외람됩니다만 절제와 자제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때 상호 약속되지 않은 질문을 던진 그 앵커의 질문이 터져 나오자 당선 직후 그 인터뷰에서 이 방송사와는 인터뷰 안 한다고 이어폰을 빼셨잖아요. 저도 언론인분들과 만나다 보면 때로는 거북하고 불편한 질문을 받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그 불편한 질문을 받으라고 정치하는 거지요. 그 불편한 질문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방송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좋은 기사 제일 많이 내보내는 방송국이잖아요.

노쇼, 노쇼 자체가 물론 호텔경제학에서 그 지역경제를 활력이 돌게 한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이번 외교에서도 만찬장 노쇼가 미국 정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역에서 기자회견도 일종의 반노쇼지요. 그 노쇼는 외교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교의 패망을 자초하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 보좌하시는 외교 보좌진 여러분들은 절대 그 일정과 동선에 있어서 감정의 절제 그리고 메시지의 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부디 좀 조력을 더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순발력과 기술 면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어쩌면 순발력과 기술보다 더 지난한 자제라는, 대

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그런 행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지요.

보십시오. 원전·방산 수출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사이버 안보 협력, 나토를 안 가실 때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나토를 가 봤자 일본도 안 간대' 그게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들은,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라고 들었어요. 남이 안 가니까 나도 안 가라고 하는 건 첫째, 겁이 나거나 둘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셋째, 할 말이 없거나 셋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왔습니다. 호주는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호주가 온 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호주는 우리나라하고 기록적인 방산 수출을 한 국가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붉은등과부라는 이름의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입장에서 독일의 그 전차군단 장갑차를 주로 의지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과 장갑차 수출 계약을 맺는다?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지만 저도 하나 보태겠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나토와 같은 그런 서로 국방과 안보를 의지하는 그 동맹과 같은 협의체와 함께 방산을 하고 있지, 우리나라하고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상외교를 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기업 간의 교류를 하면서, 그 당시 아마 한화였을 겁니다. 한화에서 붉은등과부라고 하는 이름의 장갑차를 유수한 독일의 업체를 제치고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사실 방산업계에서는 그 당시에 이 전례 없는 희소식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술진들의 노력도 있고 기업들의 피땀 흘린 영업 전선에서의 그동안의 역사도 증명하는 거겠지만 정상 간에 또는 이런 안보 협의체 간에 그런 작은 대화 또 큰 신뢰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된 겁니다. 마치 씨실과 날실이 같이 엮여서 직조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또 하나의 문제가, 대통령실은 아마 이걸 좋은 변명이라 생각했을까요? '중동 문제 때문에 안 간다'였거든요. 그런데 중동 문제 때라도 더 가야지요. 왜냐하면 중동은, 특히 UAE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란과 북한의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의 방산, 폴란드도 그렇고요, 협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요청하고 있고 바라고 있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가 본 적이 있었는데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3국이지요.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인접해 있어서 사실 우리의 관심에서는 크게 가까이 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1945년 2차 대전 때 몇 번의 승강이 끝에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러시아의 압제에 시달렸었지요. 리투아니아는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제가 면적을 체크해 봐야겠지만, 서울의 몇 배 크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보유하지 못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가위 기술입니다. 그 사람들은 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과학적으로도 창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압제 속에서 유전자가위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마치 뛰어난 민족성과 기술을 가진 동유럽의 국가들이 체코의 소총처럼, 과학기술과 방산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자유를 앗아간 공산주의의 압제 때문에 국가가 주문하는 제품만 생산하고 더 나은 질의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동인이 하나도 없었고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윤은 국가가 가져가는 그 사회에서는 자유도, 과학

기술도, 이로 인한 방산산업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프로그램이 있지만 금쪽 같은 원전·방산, 우리나라의 그 많은 수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나라들과의 협의체에 중동 문제 때문에 안 간다고요? 일본도 안 가니까 안 간다고요? 언제까지 이인자를 할 겁니까.

(「외교 천재라고 그러데, 외교 천재라고 그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외교 천재라고 어느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의원 있음)

아, 민주당분들이……

그래서 나토가 안보 억지력을 보여 주는 연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약한 고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가시면 되지요, 자유민주주의 동맹에 동의하신다면. 나토에 뉴질랜드가 갔을 수도 있겠네요.

부의장님, 화장실 잠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표를 하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4번을 현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보신 분 있으시지요? 신화 속의 키메라입니다.

지금 제가 원내지도부한테 들은 전언에 따르면 조금 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아니길 바랍니다만—내일 다시 증감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늘 위증에 관한 고발 주체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국정이 장난입니까? 입법이 여러분들 손에서 놀아나는 공깃돌입니까? 제가 필리버스터 중간에 그 소식을 접하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메라를 현출했습니다. 보시면 키메라는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까지 각각 다른 동물입니다. 신화 속의 존재지요. 포악하기도 하고 힘이 세기도 하며 사실은 인빈서블(invincible),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키메라는 우리나라 민주당이 압도하는 국회입니다. 입법부도 됐다가 사법부도 됐다가 행정부도 됐다가 추미애 위원장을 수사기간 연장 및 고발 주체로도 했다가, 아니다 싶었는지 다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손바닥 뒤집듯…… 입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정책의 ABC를 뒤흔드는 정당은 공당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입법부가 어떻게 사법부를 점령하고 침탈하는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표 9번을 요청드립니다.

김형준 교수의 '일상화한 집권 여당, 다수의 폭정'이라는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한국은 독재의 길 7단계 중 이미 5단계이며 선출독재의 유령이 배회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소개를 좀 드릴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선출독재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선출권력, 즉 대통령·입법부가 간접 선출권력 사법부보다 서열이 높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서열론 이후 국민의힘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6·3 대선 승리 이후에 집행권력 행정부와 의회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이 정부의 다수의 폭정이 노골화되는 시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처리

했다. 국무위원 등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숱한 인사청문회를 증인 없이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원천 배제하는 3대 특검법과 더 센 특검법까지 일방 처리했다.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처리 중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은 급기야 사법부를 협공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선출 독재는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집권한 대통령과 집권당이 의회 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권을 독점하고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함으로써 사실상 전제정치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뜻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유지되지만 삼권분립, 소수자 보호, 다원성 등 실질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된다. 다수의 폭정, 견제와 균형의 약화, 야당 무력화, 시민사회 및 언론 통제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장표를 5번으로 현출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여대야소 단점정부 아래에서 행정부가 다수당인 여당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고 한다. 야당의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중요한 안건에서 야당을 배제하며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적 전제정치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지금 김형준 교수님이 이 뒤에 서술하시는 것이 저하고도 의견이 같은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과 지지층의 충성 혹은 결속,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 국가지도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987년 체제 이후에 민주화의 길을 걷는 대한민국에서 선출 독재의 유령이 배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이중적 신념체계 때문이다. 이중적 신념체계란 한 가지 사안이나 분야에 대해 두 가지 신념을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부조화 이론을 정립했다. 사람들이 태도, 신념, 가치, 행동 등 중에서 두 가지의 인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며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 중 하나를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겉으로는 민주적 가치를 표방하지만 실제 행동은 권위주의적 또는 독단적일 때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을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국가 발전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합리화하거나 비판 세력을 국정 발목 잡기 등으로 매도해 자신의 행동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해석하려고 한다. 결국 이중적 신념체계는 비합리적인 판단, 현실 왜곡, 비판 수용 거부 그리고 독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으로써 선출독재 심리를 강화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권력서열론을 제기했다.

아까 제가 필리버스터에 외교·안보 분야를 진행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외교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말씀을 하시는 민주당 의원님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두 분 다 아마 그 말을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서열론은 조금은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게 삼권분립에 대한 명

백한 훼손일 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선출독재의 유령, 김형준 교수가, 7단계는 사실은 에제 테멜쿠란의 'How to Lose a Country'에서 7단계를 인용한 것을 기사에 담은 겁니다. 정치언어의 왜곡-정치적 반대 세력의 악마화-국민의 의지 절대화-사법부와 독립기관의 무력화-표현의 자유, 시민의 억압-야당과 사회운동의 해체-권위주의 체제 공고화.

인식의 왜곡일지 일관된 신념체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칙 없는 양보 그리고 정치적 타협이나 합의를 시간의 낭비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당과 영수회담에서 손을 잡으셨고 야당과 노조 간부 자녀의 우선 채용을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직 민주당과 입법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미애 의원을 통해서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K-스틸법, K-IRA법—저는 키라(KIRA)라고 부르는데요—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해야 되는 그 생존의 절박감은 기업이 가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관세협상에 미국과 한국의 치킨게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국민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노동자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몫입니다.

K-스틸법 또 K-IRA라는 KIRA법은 생산세액공제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수출하든 아니면 국내에 머물고 있든 생산세액만큼, 생산한 만큼 세액공제를 해 주자는 취지이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배터리, 전기자동차, 이 나라가 앞으로 펼쳐야 할 미래에 놓여 있는 기업들을 정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자는 법안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비를 보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정부는 비가 오는 데서 우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들어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거들어 주면 그 큰 우산 아래에서 국민들도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요. 이념으로 기업을 재단하지 말고 청구서 때문에 88%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못 이겨서 일반 서민과 청년의 우산을 빼앗아 버린다면 강성 지지층의 대통령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대통령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우산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국민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무엇으로 가려 줘야 하는지, 가림막은 뭘로 해 줘야 되는지 국가가 몸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막아 줘야 되는지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자, 민간 누구 하나의 흑백 논리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공직자는 오랜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절제가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강을 건널 때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마치 나의 주변에 1000개의 거울이 있다는 심정으로 처신에 조심하고 자신의 나아갈 길을 신중하게 살피며 이 길이 국가의 길과 병합하는지 평생 돌아보고 검증했을 것입니다. 기업으로 나가는 다른 공직자 동료의 등을 바라보며 그래도 내 나라에 소명이 있고 내 나라에 나의 비전과 역량을 합치시킬 수 있다면, 국민의 국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목표와 그 다짐 하나로 어려운 살림을 버텨 왔을 것

입니다.

기업은 어떻습니까? 지난 70년대 사막 속에서 기름을 캐고 함께 노력하면서 땀 흘렸던, 먼 타지에서 불굴의 의지로 수출의 도로를 개척했던 것처럼 그 같은 대한민국의 의지로 지금도 기업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하나의 빛을 찾아 노동자가 기업인이 손잡고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손을 하나 건네주는 것, 우산을 받쳐 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별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 마치 부동산에서 공공은 우월하고 민간은 사악한 집단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던지고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약탈하며 자본가의 탐욕으로 뭉쳐 있다는 80년대 사고를 집어던지고, 노동자는 노총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딸과 누군가의 아들로서 그들의 작은 아픔과 그들의 큰 슬픔을 보듬을 수 있는 섬세한 노동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벗어던져야 되는 것은 힘들겠지만 강성 지지층의 나라와 관계없는 요구입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해야 되는 대통령이 권력 서열을 얘기하고 입법권에 방망이를 쥐어 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권력 기반 그리고 법치주의는 조금씩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크레바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처절한 나라의 비극을 함께 막고자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입니다.

김형준 교수님의 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출독재의 유령이 배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집권세력이 강성 당원과 팬덤에 예속화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여당은 이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어준 유튜버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외 인사군이 동시에 권력을 행사하며 공존·충돌하는 다층 권력시대에 처해 있다. 당심을 우선시하는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유튜버는 물론 민심을 봐야 하는 이 대통령마저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개딸이 민주당의 견고한 주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즉 민주당의 개딸 예속화는 구조적인 문제다.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맹목적 충성심을 특징으로 하는 개딸은 정치 부족주의 행태를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도 개딸이 거부하면 파기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정하는 데 부담이 있어도 당심이 요구하면 당론화해야 한다.

정치 이론에서 보통 트라이브(tribe)—부족—와 노마드(nomad)—유목민—는 늘 상충되지만 고민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또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IT 산업, 한창 1990년대 후반에 우리가 IT 붐이 불었지요. 그때 코스피 시장, 벤처 1세대들—지금으로 하면 다음이지요—활활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늘 영광의 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요. 항상 저희가 캐즘(chasm)이라고 하는 산업에서의 지체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천재적인 역량이 상업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통과의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뒤에 2000년대에서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또 한 번의 도약이 있지요. 물론 금융위기 직전에 말이지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이른바 천리안을 뛰어넘어서 네이버로 지금의 검색엔진을 가동하는 많은 벤처 비즈니스, 이제는 중견기업, 대기업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의 창의성과 그들의 기술에 있어서의 놀라운 집념은 대한민국의 퀀텀 점프

(quantum jump)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노마드였습니다. 어느 한곳에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나라의 국부로 끌어올리는 그런 우리의 전성시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저는 197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71년에는 아직 대한민국은 중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전후에,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의 GDP가 60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 1950년에서 60년, WTO 체제가 69년 70년 71년 그 언저리에서 1990년대 중반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는 다자무역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조금씩 세계와 약속을 하고 무역이라는 것을 트면서 그 가능성을 펼쳤던 시대였습니다. 초창기였지요. 그 뒤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 뒤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를 호령하며 압도적인 성장과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즉 이렇게 긴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는 저는 팽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 수축 사회가 건네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많은 팽창의 저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정치와 교육이었습니다. 정치는 외교로 국경선을 넘는 행보가 있을 때 정쟁을 멈췄습니다. 교육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고 어떻게든 아이들이 이 나라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을 키워 냈습니다. 정치와 교육이 그래도 텔레비전을 켜면 볼 만했고 아이들의, 지금처럼 정치인의 과격한 언어나 아니면 증오나 아니면 혐오를 부추기는 그 같은 갈등 상황하에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누구 탓만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정치를 양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진영에 소속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 교수님 글을 보면서 사설이 길어지는 이유는 다층 권력시대, 당원 민주주의, 당심, 이 같은 명제가 과연 대한민국의 이익과 일치할 수 있느냐 이 어젠다가 우리 정치인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호흡이 좋았지만, 그래서 정부 구조조정도 일론 머스크에게 맡겼지만 미국 내에서…… 일명 우리가 정치권에서 캠프를 하다 보면 '갑자기 굴러온 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생경한 일론 머스크의 등장에 견제하는 내부의 시선이 적지 않았고,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그 창의적 굴기의 정신을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견 동경하며 그의 정부 구조조정을 기대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지요.

일론 머스크와 만난 저는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테슬라의 팩토리, 즉 전기차와 관련한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만나기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도상 훈련도 했지요. 만약에 토지 인센티브, 즉 염가에 공장부지를 제공하라는 제안에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 혹은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사문화, 노동의 유연성과 관련해 그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야 할까? 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에서는 이미 진입의 장벽이 높게 쳐져 있는데 외곽을 떠돌아야 되는 비정규직과 계약직과 하청과, 나에게 언제 미래가 안정될지 몰라 불

안하고 초조해하는 젊은이들의 그 양질의 노동력을 어떻게 교육하고 흡수할지 대한민국의 정책 비전을 보여 줘야 될까 많은 상상과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정작 저에게 질문한 것은 공장부지의 저렴한 혜택이라든지 상품·서비스·재화에서의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묻더군요. 제가 이름이 김은혜였으니까 그때 저를 그레이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레이스'라고 하면서 '한국은 저출산 정책,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엉뚱하네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왜냐하면 늘 정치란 지난 일주일, 앞으로의 한 달 그리고 총선 때까지의 3년, 정권을 잡을 때까지의 4년,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주기를 잡지, 생각의 주기를 잡지, 이 나라의 연대를 300년 연속적인, 5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천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저도 잠깐 기업에 있었지만 늘 300년을 영속할 수 있는 그 기업으로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가릅니다. 내가 지금 역량을 보이고 있는 이 지점이 언젠가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임을 깨달아 발견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기업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저출생 문제를 던진 것은 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한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뿐 아니라 팩토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과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단기 모두를 물은 것이라 봤습니다.

팩토리가 아니더라도 늘 일론 머스크는 다자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생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속성, 인구절벽에서도 어떻게 회생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5년, 10년 주기의 생각의 주기보다 일론 머스크의, 그의 스팬(span)에, 즉 그가 갖고 있는 범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 이후에 저는 샘 올트먼, 오픈AI지요, 샘 올트먼과의 만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약진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지금 한 4644조가 애플입니다. 2위가 엔비디아고요.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아마존, 5위가 구글입니다. 아래는 아람코,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와 브로드컴, 테슬라가 있는데요. 아람코는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가 정유를, 석유라고 얘기할 때 아람코 얘기를 하지요. 메타나 브로드컴, 테슬라 모두 AI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아마존 의장인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뒤에서 다시 한번 미국이 이제는 전 세계의 경찰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제국을 상상하고 그 부흥을 겨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론, 부족…… 부족은 머물러 있지요. 갈라파고스도 그래서 결국 유전적 진화가 덜된 것 아닙니까? 헤테로(hetero)를 싫어하는 우리의 정치 문화는 이제는 헤테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상대 정당이 다른 것은 상대 정당이 열등하거나 아니면 상대 정당이 우리보다 틀려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시작하고자 했는데…… 증언감정법은 재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딸 문화, 당론, 정치 부족주의, 지금 조금씩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선출 독재라는 그런 말이 저는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내일 국회의장님으로 또 바꾸신다니까 그런 장난 같은 해프닝 하시지 말고 진지하게 법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토론하고 얼마든지 대화하고 싶습니다. 증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단호한 처벌 공감합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하지 않고 3분의 1로도 얼마든지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입법 없앴다고 혹시나 했다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역시나 했는데 내일은 또 국회의장으로 갈아타신다고 하니 가뜩이나 국민들 민생이 어지러운데 법안 갖고 이렇게 장난하실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시민사회나 언론, 제도의 견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모리스 멀러드 교수까지 인용을 해 보자면 민주주의의 쇠퇴는 급격한 전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혹시나 한새벽 방송을 보고 계실, 국회방송을 보고 계실 국민이 계시다면 이 정치를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관심과 방치는 정치를 사그라들게 하는 독입니다. 반드시 따가운 질책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입법에 대한 열정으로 저희를 채찍질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자극제로 삼아 번성하고 성장합니다. 그 유지에 무관심해지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법치이자 삼권분립이자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무관심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무관심은 정치를 고립된 사막 안에서 퇴보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자본주의의 진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국민들의 관심만이 정치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잠시 드리려다가, 아까 머리는 사자, 몸통은 양, 꼬리는 뱀 또는 용의 모양을 하고 있는 키메라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게 민생 입법, 예산 처리 본연의 기능을 저희가 못 하게 되면 나중에 가장 애먹는 분들이 기업인분들이고 노동자분들이고 말단 공무원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규제를 풀어 주지 않고 규제를 꽁꽁 묶어 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 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권력에 서열이 분명히 있다 지금 이 논점을 던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라고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 임명된 권력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 최상위 대통령을 두 번 탄핵한 곳이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임명된 권력보다 선출된 권력이 더 상위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임명된 권력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의 최상위인 대통령을 두 번 탄핵한 곳이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

위다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삼권, 즉 입법·사법·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본질로 하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따라선 선출권력인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하면 간접권력인 하위 사법부는 그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요. 헌법적인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 언어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낙인을 찍을 수도 있고 사고의 번영으로 갈 수도 있고 둘 중의 하나인 겁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적 명령이라고 하는 게 헌법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분립이지요. 헌법의 시스템은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의 입법부 국회의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분들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4년짜리 인생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3년 뒤엔 내가 이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역구민에게 현재 이슈를 드라이브를 걸어서 함께, 한 명이라도 더 지지 세력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인데 다만 우리의 수명은 4년 단위로 잘려 있다는 거지요.

대통령 5년, 대법관 6년, 국회의원 4년, 왜 차이를 뒀겠습니까? 바로 견제와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일치시키면 서로 짬짜미로, 아니면 치열한 갈등으로 해야 할 일도 못 하고 권력이 흩어지니 견제와 균형으로 팽팽하게 국민을 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눌 때 동등한 지위에서 당신들은 견제하고 균형의 원리를 가져. 그러나 그 근저에는 국민이라고 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있으므로 주권자의 뜻을 받드는데 헌법적 논리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 소임을 받은 우리 국회의원의 소명이자 책무입니다.

착각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고 멋대로 개정해서 국민 뜻 모르겠고 당심에 따라서, 강성 지지층에 따라서, 유튜버에 조아리면서 그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얼마나 대한민국의 비극입니까?

우리 입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직접 설정한 국가 시스템의 기본 설계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짜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이 지시하면 따르는 행동대장인 거지요. 그런데 행동대장인 우리가, 행동대원에 불과한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 설계를 바꾸겠다? 그건 오만이지요. 법률을 헌법과 동일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회의 입법 의사가 주권자의 헌법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면, 배반할 수 있다면, 그걸 이미 1940년대부터 해 오신 분이 나치, 히틀러지요. 30년대부터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의회 화재와 함께 기적적으로 나치당이 힘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감법은 그게 처분적 법률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권한이 국회 입법권인데 특정 사건, 특정인을 원안은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려고 한 거지요. 명백한 진정소급효라고 호소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이미 처리됐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정소급효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본회의까지 오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안입니다. 당사자의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률로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 일시적인 정치적 다수, 즉 4년 수명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특정인을 잡겠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수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헌법 개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법률을 만지작거리는 국회의원이 한다? 수치 아닙니까?

정치 언어의 왜곡과 그리고 국민의 의지 절대화, 1단계와 3단계에 걸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중요하다,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이어서 간접 선출 권력이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말을 보태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공세에 대해서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 준다고 호응했습니다.

국민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지요. 누가 국민이라는 겁니까? 국민은 누가 규정합니까? 뭘 보고 국민이라고 합니까? 개딸을 보고 국민이라 하시는 겁니까?

국민주권은 허영 교수님, 이인호 교수님의 개념에 따르면 국민에게 국가의 주권이 있음을 뜻하는 말이 국민주권입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선택이 곧 국민 전체의 단일한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죄송한데 저희가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제발 좀 죽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3의 대사가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나 아렌트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권을 뭔가 하나의 궁극적인 의지다라고 천명하는 순간에 자유로운 정치행위는 왜소해집니다. 왜냐하면 국민이라고 하고 다수결이라고 하고 그 하나가 국민이다라고 하니까. 개별 주체, 부품 같은 소모품 말고 각자 자유로운 영혼과 창의를 가진 국민의 개별적인 특수성은 외면한 채 기계를 꾸리는 부품이 돼라, 그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계를 꾸리는 부품 속에서 국민주권이라는 말 하나는 단독의 상징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거지요. 위축되게 하고요.

허영 명예교수는 국민이란 다양한 개성과 이해관계를 지닌 무수한 인간의 집단이 있는데 그것을 그저 상징적으로 표현한 관념의 크기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의 서열을 그려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에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에 우열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모든 권력이 절제하고 억제하며 책임을 지게 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헌법 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 1항) 속하도록 했습니다.

다수결은 절차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다수결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수결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목적과 우리의 이상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무도한 방송 3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대법관 증원, 공직선거법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행위 면제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순간, 본말이 전도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추락합니다. 어렵게 세운 민주주의,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많은 후진국들이 우리에게 이미 역사를 통해 웅변해 줬습니다.

헌법은 늘 입법·행정의 힘과 사법의 제동을 함께 엮어 놓았습니다. 클러치와 같은 논리지요. 그래야 시계 바퀴가 맞물리면서 바늘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히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압력으로부터 헌법상 독립된 지위에서 국민, 특히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공개재판, 이유설시, 판결서 공개, 상소제도, 법관 징계·탄핵 등 책임과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요. 그곳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절차일 뿐 전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는 늘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역사 속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권은 권력의 주인을 정한 출발점이지 권력기관 간의 주종 관계를 정당화하는 토대로 활용돼선 안 됩니다. 함부로 주권이란 말 하지 마십시오.

사법부를 선출권력의 위계 아래로 재배치하려는 시도는 겉으로는 국민주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결로 정당화된 최고권력의 자기 증폭제입니다. 나중에 터진다는 겁니다. 자아를 그렇게 크게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의지가 온전히 나의 것이다, 국민의 의지를 독점적으로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국민주권은 콜라병처럼 무엇으로도 변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허영 교수님과 이인호 교수님 글을 읽다가 제가 우연히 재미있는 착상으로 이 PPT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세계일보 장혜진 차장님 글인데, PPT 6번을 현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부시맨이 아마 그런 내용인가 봅니다. 부시맨 마을에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는데 이게 사람들이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각자 쓰임새가 달랐던 거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절굿공이로도 쓰고 또 어떤 분들은 콜라를 불면서 저 포스터처럼 악기로도 쓰고 아니면 콜라병이 아래가 비교적 약간 둥그런 모양이니까 무늬 찍개로도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자님의 지적은 국민주권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함부로 연탄 차지 마라, 누군가에게 따스한 적 있냐'는데 저는 '함부로 국민주권 쓰지 마라, 국민이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을 하나의 상징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하는 거지요. 다수결이 늘 옳은 게 아닌데 수단인 다수결을 목적처럼 쓰다 보니까 다수의 횡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익의 도구가 아니라 국회의원은 폭력의 수단이 됩니다. 폭력의 주체도 되지요.

다수의 선택이 꼭 국민 전체의 의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행정의 힘과, 여기 장혜진 차장도 사법의 제동을 함께 엮어서 다수의 압력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지와 창의와 개별적인 개성을 인정해 주는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권력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주권 남용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의 콜라병이 된 국민주권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보면 현실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 속에 있다, 이걸 당이 활용하는 거지요. 정치가 활용하는 겁니다, 마치 사기 치는 것처럼. 당이 진실이라 주장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다, 마치 내가 말하면 법이 된다는 나치의 히틀러처럼 악도 선이라 말하면 선이 되듯이 히틀러가 곧 법이고 당이 진실이라 주

장하면 바로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는지 이 여의도에서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서글프고 죄송합니다.

여기 법조인이 이렇게 읊조리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헌법 교과서에서 배운 국민이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다'. 국민주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선출권력 아래에 두려는 시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 기자는 역시 국민주권은 권력의 주인을 정한 출발점이지 권력기관 간에 서열을 두려는, 서열을 두기 위한 기준이나 토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권력이 다수결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활용하려는 순간 추락하는 것은 삼권분립입니다. 국민주권은 콜라병처럼 어디든 쓰이겠지요. 선출된 권력이 짐이 곧 국민이어야 하고 국민의 의지를 독점적으로 대리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지는 겁니다.

영화 부시맨 결말을 보니까 부시맨이 나중에 세상의 가장자리에 자기가 드디어 도착했다 안심하면서 이제는 필요 없다고 콜라병을 절벽 아래로 던졌다고 합니다. 낯선 물건 하나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렸듯이 국민주권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다가 헌정질서에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시사점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를 닮아 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요, 잠시 위험한 시도 몇 가지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을 인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고 그 안에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제가 설마 했는데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는 걸 공식화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당초 국정위의 입장을 보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계획안에 감사원 이관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겠다는 취지에서 검찰 또 경찰 개혁과 감사원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잇따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물어보니까 이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입법부의 사법부 점령 뿐만 아니라 독립기구인 감사원까지 입법부의 발 아래 두게 하는 게 아닌지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감사원의 이관이 추진되자 헌법학계의 반응을 좀 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일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감사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계와 학계에서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기관화해야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거 늑대 소굴에 있다가 호랑이 소굴로 옮기는 거다라고 하더군요. 대통령으로부터는 독립되겠지만 그동안 제기된 정치감사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감사원이 국회 소속 이관의 조짐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지난 10일에 감사원 사무총장—정상우 총장인가요—취임식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국회하고 협의해 수립하겠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국회 협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6일에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이런 부작용을 시정하고자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는 취지였지요.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한 이후에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 언급하셨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도요. 해도 정도껏 폐지해야지요.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의 이야기가 있던데, 명예교수님입니다.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이관되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국회의원 개개인의 세무나 회계 관련해서 감사원이 예속성이 되지 않도록 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도 말로는 행정부에 감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이라고 하는데요, 국무원 직속 부처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중국도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외관을 고려해 독립성을 강조는 하는 거지요. 그러나 헌법이 명시한 바와 달리 국무원 내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도 뚜렷합니다. 즉 감사 대상이자 정책집행의 주체인 국무원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그 국무원을 감사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는 거지요. 이 때문에 헌법의 독립성 조항은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고 실질적 구속력은 부족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현재 전해지는 입장 그대로 간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뺏기는 건가요? 결국 수사 기간의 연장, 고발 주체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추미애 위원장이 아닌 의장님으로 변경하는 안을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잠깐 휴식 시간 중에 들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도 안 하시고 위원들 입틀막, 발언을 못하게 하고 퇴장시키면서 맹활약하고 계신데 이런 뛰어난 발상도 제기하셨네요.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가뜩이나 지금 카카오가 자기검열 하면서 신고받으면 내용을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국민들 카카오로부터 대거 이민을 떠나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손 한 번 들었다고 바람처럼 누우면 안 되지요. 무엇보다 개인의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무리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공기업처럼 구십니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통신기록 조회라고 통칭 이야기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장이 없이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그런데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기록, IP 추적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위치,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영장으로 해도 겨우겨우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개인정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추 의원이 이것을 발의한 이유가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이런 데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게 바로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거지요. 국민의 주권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법안을 제정하는 이유인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든 거지요.

국민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국회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심지어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탐색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용될 여지가 있다고 남용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체성을 띠지 않고 위원회라고 대충 이야기하니까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이게 뭡니까? 이현령비현령 아닙니까? 내가 원하면 한번 추적해서 파 보고 내가 필요가 없으면 안 할게라고 하는 그 행패, 그 폭력을 누가 부여했다고 이런 존재하지 말아야 할 귀태 법안을 만드는 건지 내일 볼 수 있으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늘 정부도 귀찮고 불편하니까 입법부 통해서 뭔가 법 만들 게 없나 고민하거든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청부 입법처럼 입법을 제안하는데 그 같은 OEM 법안이 아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입법부의 힘을 넘어서 폭력으로 전개가 되면 '그게 민생과 무슨 관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법과 민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 나중에…… 이미 지금은 중수청, 많이 갈라 놓았지만 기소할 때까지 또 공소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기능을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해석을 했었는데, 아이들 중에서 부모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에 또는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 또한 검사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같이 권력자의 눈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데서 정부조직 개편도 그리고 우리의 법안도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 3법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 빼기 이진숙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과 제도가 맞춰진다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제가 가끔 기자분들을 만나도 기자분들이 벌써 많이 위축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이한 이 기사 하나 불러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어대명 추대 경선 들러리냐, 어떤 결정도 수용', 지난 4월에 민주당의 경선 룰 진통을 쓴 기사입니다. 제가 기사를 몇 번 읽어 봤는데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기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민주당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지 함께 고민해 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 경선 룰 진통. 국민 50%, 당원 50% 무게 실리자 비명계 반발. 선거인단 모집방식 의견 분분. 비명계 모든 가능성 심각하게 고민.

혹시 이날이 기억나세요, 의원님? 읽어 드릴게요.

더불어 비명계는 11일—2025년 4월입니다—당이 조기 대선 경선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반발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현재 일반국민 투표만 100% 반영하는 완전국민경선, 즉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과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형식을 두고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비명계는 이 중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주장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채 국민참여경선에 무게가 쏠려 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은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고 룰 미팅을 한 번도 갖지 않은 채 완전국민경선 요구를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일절 듣지 않고 계속 불통한다면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가요, 대선후보는 이재명인가요? 대선후보겠지요.

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즉 어대명 추대 경선의 들러리로 나서는 것에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 대리인인 고영인 전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없다,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구실로 국민경선을 파괴하려는 결과가 보이면 김동연 캠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후보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룰이 정해진다면 과연 이 룰은 누구를 위한 룰이 되겠느냐며 그런 식으로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의 참여 방식을 어떻게 할지, 즉 선거인단 모집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참여 의사를 밝힌 일반 국민을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국민 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해 왔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역선택 우려 등을 고려해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전 의원은 역선택 우려라는 막연한 구실로 국민 선거인단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들어 온 국민 선거인단 모집 전통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영인 전 의원이시군요.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선 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선수인데 심판의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나'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른 어떠한 결정도 다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저는 이거를 다섯 번 읽었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경선에 나간 비명계 그리고 뭐 굳이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 당시의 전 대표까지 고루 의견을 반영했고 또 쉽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대선 경선 규칙과 관련해서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지사 측 또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역사까지 잘 골고루 다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중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것은 진통이라는 표현을 잘못 써서가 아니라 언론에 일명 똑바로 하라는 경고를 보낸 거지요. 이제 언론은 진통인데 진통도 못 쓰면 홍길동이 되는 겁니까? 경선 룰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이지요. 아니, 누가 진통을 문제 삼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오히려 국민주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말인데요. 결국은 저는 검열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기자에게 진통을 진통이라 쓰지 못하게 한 겁니까? 이건 진짜 민주주의의 진통이지요.

실제 민주당 인사들이 경선 과정에 반발한 것도 맞다고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명백한 언론 겁박입니다. 방송 3법 통과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오히려 연

합뉴스 기자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주변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일명 비명계분들은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공개 반발하신 모양이에요. 불통이다 일방통행이다 비판이 쏟아지니까 진통이라는 당연한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담았겠지요. 아니면 경선 룰을 둘러싼 적절한 긴장을 반영하는 말이고요.

연합뉴스부터 이렇게 길들이기 시작하시면 정말 땡명뉴스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언론들은 그냥 무조건 노트 들고 노트북 들고 와서 자판 두들기며 받아쓰라는 건지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유감입니다. 정치인분들은 불편한 질문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불편한 기사도 감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 부대끼기 시작하시면 나중에 큰일 못 하십니다. 잔매 아끼려다가 큰 매 맞으신다는 뜻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아도 언론중재위를 보도통제 수단으로 삼아서 진통 같은 거 그런 걸로 엮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부가 이렇게 원심력을 주변에 보여 주게 되면 뜻하지 않은 찰과상 또는 치명상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악의 길은 늘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이 국민의 알권리와 브리핑의 투명성을 위해서 대변인과 기자 모두 얼굴을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측이 표현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절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선택하는 단어 하나하나 누군가 보고 있다고 의식이 되는 순간 절제되고 다듬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기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정되는 역기능이 꽤 만만치 않아서 제가 드리는 지적입니다.

기자님 입장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를 하는 게 영상에 박제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실수로 넘어가 주면 되는데 속칭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심지어 의도성까지 공격을 받습니다. 혹은 직언 직설이 난도질을 당합니다. 의도가 지금 점점 보여서 더더욱 기자들이 걱정하지만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쓰면 책임을 지지요. 책임을 져야 하지요. 진실이 생명보다 더한 삶의 이유인데 얼마든지 그것은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게 대통령께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남들이 말하는 사이다 질문 했다가 봉변당해 가지고 지금도 제대로 질문을 못 하는 기자님이 있어요, 유튜버에 의해서 봉변을 당해서요. 생중계를 하니까요. 그 생중계에서 의도를 갖고, 이른바 렉카가 동원되는 거지요.

기자라는 게 업의 본질이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기자님들은 질문하면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기자의 삶은 그 질문에서 유지되고 종료되지요. 통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대통령실은? 그렇게 사이버에서 굳이 징벌적손해배상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명예 그리고 본인의 프라이버시 관계없이 낙인찍고 조롱거리 하고 웃음거리, 희화화 만들어서 조회 수 올리는데 왜 대통령실은 침묵하는 겁니까. 설마 즐기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라면 반드시 이 같은 진행 방식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적어도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마련해야 대통령실입니다. 어디 허접한 도로 위에서 브리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구중궁궐 안에서 보호받고 계시잖아요. 기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자들을 그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 주십시오. 언론의 생명과 보도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기자에 대한 난도질 대신 대변인이 브리핑 기록을 난도질하다가 사퇴 압박을 받으셨는데 그 원칙적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있으니까 말을 쭉 이어 가다가 원칙적 공감을 밝힌 게 아무래도 대변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이런 사퇴 압박에 가세한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되는 대변인실 속기록을 삭제를 하고 기자들이 반발해서 다시 속기록을 공지했지만 수정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이게 제가 한때 대변인을 했던 사람으로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뭐든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속기록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에 대한 대변인의 발언은 곧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파장은 아직 걷어졌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정권 끝까지 원칙적 공감은 갈 겁니다.

잠시 쉬어 가는 코너로 주진우 의원의 일명 삼통 포커 대회라고 하는, 제1회 개딸배 삼통 포커 대회라고 하는 농담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김어준, '이 판은 내가 먹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걸어'.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콜'.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니야. 나도 콜'.

추미애 위원장, '그 정도로 이 판 먹겠어? 내란특별재판부 받고 대법원장 사퇴 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장 사퇴 공감해. 나도 콜'.

대변인 발언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현희 의원, '추미애 너만 지방선거 나가? 나도 지방선거 나가려면 필요해. 내란특별재판부 받고, 대법원장 사퇴 받고, 국정농단재판부 더!'.

정청래 대표, '내란특별재판부 받고, 대법원장 사퇴 받고, 국정농단재판부 받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다 걸어. 올인!'.

이런 웃지 못할 농담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시중의 민심입니다.

방미통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을 결국은 통과를 시키셨잖아요.

아까 PPT 다시 현출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PPT는 9번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의 남용처럼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가 있습니다. 1번,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입니다. 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거지요. 저게 지금 장관이 되신 분의 발언입니다.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강하다는 걸 보여 주겠다'.

두 번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입니다. '당신들은 공당이 아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게요? 이게 며칠 전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안 나오게 하는 게 어떠냐', 사실상 그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왜 기관증인을 배제하느냐'. 기관증인이라 하는 것은, 대학교 가시면 필수과목·선택과목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필수과목이에요.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빠진 적도 없고요. 국감이 시작하고 나서, 88년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이 왜 안 나오냐' 얘기할 때 당장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더니 민

주당 위원에게서 나온 발언이 ‘당신들은 공당이 아니어서’입니다. 사실 그동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난처하면, 즉문즉답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렇게 답변을 하시면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궁금증이 폭증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정말 실세구나. 비서실장보다 더 높고, 도대체 대통령실 내 의전 서열이 몇 위길래 저 정도 위원님들이 호위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민주당이 거칠 게 뭐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마음먹겠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탄핵, 특검, 대통령도 갈아 치운 분들이 1급 비서관 앞에서 저렇게 얼어붙는다?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을 몰랐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끼리를 만지지 마’라는 이론과 비슷한 거예요. 김현지 비서관을 그냥 늘상 하던 대로 기관증인으로 그대로 했으면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폭발적인 아이돌급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그게 대통령을 잘 모시는 걸까요? 인생이 어렵기는 합니다. 늘 당장 그 앞에서는 이렇게 모시는 게 국가·사회에 봉직하는 것처럼 보여도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현명한 처신을 내리리라 기대합니다. 시중에서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고 또 일신상의 사유가 생길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 또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미리 시장에 풀어놓은 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고, 그게 아직 100일 갓 넘은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많이 들으셨지요?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성비위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폭력이 내 편이면 무죄고 남의 편이면 유죄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방송 3법 통과, 징벌적 손배 도입이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방미통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공식을 설명드렸는데 방통위 마이너스 이진숙은 방미통위, 이진숙 축출법을 그렇게 애써서 고안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진숙이 미웠나. 말씀하시는 게 좀 강단 있게 하기는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쳐 냈으면 방미통위법이라도 제대로 만드셨으면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휘황찬란했습니다. OTT까지 하고 비즈니스산업에 있어서의 플랫폼까지,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사업자 중요한 것 모든 국민이 알지요. 진작 했어야지요. 그 말마저 누구 한 사람 내보내려고 구색 갖춰서 법을 만든다고 하니 많이들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니까 그 OTT도 이번에 방미통위법에서는 제외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 전체 방송·미디어·통신을 위해서 거창하게 ‘미디어’라는 말을 붙였는데 붙인 것은 미디어가 아니라 정치권 추천 인사만 붙였습니다. 기존의 방통위 상임위원 체제가 5인인데요, 일곱 명으로 늘렸어요. 두 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료방송 기능 이관으로 업무의 양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유료방송…… 저 방송도 하고 통신도 했던 사람이라 지금 이 법을 만들어서 이진숙 쫓아내는 데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구나, 지금 위축되어 가고 축소되어 가는 유료방송을 끼워 넣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필리버스터 그 소동을 다 겪으면서도 이진숙 위원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치권 추천 인사가 두 명 늘어나서요,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민주당의 설립 취지가 무의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는 말 꺼내지 마라, 무색해졌지요. 여야 추천 비율이 3 대 2에서 4 대 3으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정파성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직원들은 어쩌나요?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아 있는 정무직 위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 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게 자칫하면 헌법상 공무원 신분, 임기 보장을 위배해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님이 대단한 분이네. 이 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이 큰 법체계를 다 뒤흔들어 놨지요.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자진사퇴는 없다.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꿋꿋하게 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경력을 이 나라의 공정방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게 일명 후흑론의 정치에서는 경제적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혹은 국가에 닥친 재앙 혹은 위기를 내 지지기반을 확산하게 하는 이른바 핵심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미 감정을 제가 값싸게 국내 정치용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국가가 직면한 그 도전 과제를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데 활용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상한 도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그간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친중, 친북 그리고 살짝 반미 이미지로 국제사회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이력만 본다 하더라도, 국정원장까지 사실 미국으로서는 까칠까칠하지요. 거북하게 느낄 겁니다. 내가 내각을 누구로 중용하고 내 주변을 누구로 포진시키느냐에 따라서, 정치는 인사가 곧 메시지가 돼서 외교로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비주류 세계관 혹은 비주류 이미지보다 워싱턴, 도쿄에서 글로벌 진영과 대면하는 그에게 오히려 그간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 그리고 친중, 친미, 반미라고 하는 족쇄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삶에 대한 일화가, 어떻게 히틀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회자가 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정부를 선택하고 또 본인이 특정한 진영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마음속에 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 안전과 번영까지 이 정부가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미래 가상의 약속을 그리기 때문이지요. 약속의 큰 그림이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 퍼진 경제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이고 빵·우유·채소의 가격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지급불능의 급여 또 노동 소요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폐쇄되면서 양초,

가연성 가구로 열과 전기를 대체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소요는 두려움과 좌절에 휩싸인 폭증하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발생합니다.

실업률은 무서운 속도로 매일 계속 증가하지요. 질병이 만연하고 병원은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버려졌습니다. 특권을 가진 소수 사람이 약 또는 뭐든지 남는 거요, 약을 비축하거나 물물교환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부유층들은 공동체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재산을 무작위로 파괴하고 도둑질하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경단—이게 약간 사설 경찰 같은 사람들이지요—또 담을 높게 쌓고 있는 출입이 제한된 공동체에 그 부유층들은 숨어 지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멍 뚫린 국경으로 멕시코의 마약왕들이 몰려와서 파괴를 일삼고 혼란 속에 도둑질할 물건을 찾습니다. 문명사회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돼서 학교, 경찰, 소방, 비상 네트워크와 같은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죄송합니다.

연방 민병대에 남은 자들조차 계엄령을 집행할 수 없지요. 가족과 가족 단위가 붕괴되고 혼란과 범죄가 폭증합니다. 친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모여들고 대도시 밖에 친구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온전한 정신을 지키려고 도망치지요. 이럴 때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분노하지요. 그런데 나를 지켜 줄 줄 알았던 정부가 사실은 외국에 절망적인 빚을 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 더욱 화가 치밉니다. 수십억 달러는 마치 갚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빌렸지만 수십억의 빚이 수조가 되고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준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가상의 위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기금은 40년 뒤인 2065년에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5세인 2000년생이 앞으로 65세가 되면 연금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거지요. 연금개혁안 통과 이전에 비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추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2065년 이후에는 뾰족한 대책이 잘 안 보입니다. 가상의 위기가 그렇지만 다가올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가 돼야 되는데 오늘보다 못한 미래가 하루하루 쌓여 가고 있다는 거지요.

미래세대는 얼마나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까요? 예산정책처는 국가가 연금가입자에게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모자란 돈이 얼마인지 추산한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만일 현행 제도에 변함이 없다면 2095년까지 1820조 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줘야 할 돈을 지난해 말 기준 화폐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금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 연금특위나 개혁안 나왔을 때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인구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연금 주는 정도, 그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재정 안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어도 꽤 늦은 거지요.

유승민, 15년에 원내대표셨지요.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는데 그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해서 상당히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정가에서 아주 작게는 대통령의 방침과 어긋나

서 크게는 정부의 기조를 흔들 수 있거나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연금에 적용해서 재원 없는 연금은 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사실은, 지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청년들입니다. 지금도 2030 쉬고 있음 청년이 40만 명 정도일 겁니다. 그만큼 오히려 소리 없는 청년들의 침묵을 더 무거운 긴장감을 갖고 경고로 새겨야 합니다. 정치권이 청년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연금에 대한 조속한 논의 절차가 착수되고 진행되고 속도를 내야 하지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의 원리를 보면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 금리를 깎아 주자거나 이런 말 못 합니다. 아니, 알고도 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그걸 한번 실행해 본 다음에 연체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돈을 빌린 분들도 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래저래 의욕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이번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간망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 인프라 시설 투자가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통 크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그 정도의 적극성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물가 상승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심성으로 사업 남발로 이어지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 없는 도로, 고추 말리는 공항 이런 실패 되풀이하지 말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안공항 예전에 고추 말렸다가 그래도 지역주민분들이 원하시고 그래서 국제선까지 놓아 주시긴 했는데 작년에 12월의 참사 왜 났겠습니까? 선심성 사업으로 툭툭 말 던져 놓고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까지 하필이면 지역주민분들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동고동락했던 그 정부에서 매번 이번 사고로 문제가 됐던 둔덕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높은 점수를 주거나 콘크리트로 메우는 설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에는, 항공기 사고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고보다도 항공기 사고 조사가 까다로운 이유는 일어나는 사고의 원인이 한 가지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치즈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치즈 이론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겹의 치즈가 있는데, 사실 에멘탈 치즈인가요, 스위스 치즈 중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린 치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치즈에 공항 사고 시점, 항공기 결함, 엔진 동체, 조종사의 조종 미숙 그리고 기후 혹은 버드 스트라이크를 낼 수 있는 새의 침투까지,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인들이 마치 치즈의 구멍을 맞추듯이 하필이면 그때 모두가 다 결합해서 동시에 그 원인들이 치즈 구멍 맞추듯 발현이 될 때, 복잡한 항공기 사고를 표현할 때 치즈의 원리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무안은 제가 그 12월 추웠던 활주로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고

제주공항에서 혹시나 정비에 결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프랑스가 합작한 회사의 엔진에서 결함은 없었는지, 조종사의 미숙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한 뒤에 콘크리트가 숨어 있는 둔덕과 부딪혀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둔덕이 세워진 경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무안에 내려가고 광주에서 어렵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부둥켜안고 위로하는 유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고조사단이 프랑스 파리로 떠나서 엔진과 동체를 이동한 채 현지에서 세계 각국의 조사단과 함께 시험하는 것을 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는 가창오리—상당히 큰 오리 떼입니다—수만 마리가 하필이면 비행기가 그때 착륙하는 시점에 날아오는 바람에 양쪽 엔진에서 가창오리의 깃털을 발견했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버드 스트라이크가 항공기에,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아니겠지만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기장이 그 비행기를,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다 하더라도 한쪽 엔진만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쪽 엔진은 왜 함께 꺼진 것처럼 착륙을 했을까? 그리고 둘 다 꺼졌다면 어떻게 조금 더 날아서 동체착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 수 있었을까? 엔진이 둘 다 꺼지면 바로 추락 아닙니까? 그런데도 꺼진 엔진을 부둥켜안고 조종사의 혼신의 투혼이 그 기체를 동체착륙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일까? 많은 의문점의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조종사의 실수로 엔진 2개를 무력화시켰다는 사고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과학적이라면 받아들여야 했지만 다른 원인과의 집중력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 둔덕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사망자, 이미 떠나고 가버린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문책성 원인 결과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상당수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는 돌아가신 분의 실책 혹은 돌아가신 분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 원인으로 떠밀고는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여전히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적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것,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은 유가족들의 눈물과 아픔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왜 그 많은 호남에 계신 의원님들은 좀 더 함께 싸워 주시지 않나요? 왜 사고가 난 유가족들 이제 12월이면 1주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를 오가면서 그 분들은 공백한 시선으로 하늘을 보고 있나요?

(「증감법 관련된 얘기만 하십시다. 또 왜 거기서 호남 의원들까지……」 하는 의원 있음)

함께 노력하고 함께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잘 압니다. 유족분들에게 그러면 저는 둔덕이 문제가 있고 콘크리트로 세웠는데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의 결기가 아니라면 저는 이 같은 사고의 진실을 저희가 파헤치고 그리고 끝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여전히 부족했다는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약자를 오히려 더 약자로 만드는 입법의 미비 그리고 입법의 사법부화, 입법의 사법부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논의와 관계없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철저한 수사·조사 그리고 끊임없이 유가족 곁

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도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자를 위한 약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국 방송 3법 또 방미통위법, 정부조직법,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전과 9범의 사기꾼을 불러들여서 있던 죄를 없게 하고 그리고 800만 불 대북 송금의, 일명 판을 엎고 판결을 뒤집는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악법 요소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해서 선심성 사업 남발로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차 없는 도로, 아까 고추 말리는 공항 이야기를 하다가 무안으로 갔는데요. 고추 말리는 공항, 그때는 사고가 있을 수가 없었지요. 대신 재정에 사고가 났지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께 진상 규명해 달라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의혹 제기, 수사 확대,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했지요.

(「할 얘기 없으면 그만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여객기 참사만은 다릅니다. 정부 여당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저는 유의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선다고 특별히 뭐 더 될 것 같지 않다. 기다려 봐라'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고 함께 모색해 가는 게 그게 정부 당국자를 찾은 유가족들이 기대하는 것 아닐까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데 의원님들께서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법부의……

의원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신성장 사업을 발굴해서 세입 기반을 넓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빌려 쓰는 씨앗이 마중물이 될지 재정 상황만 악화시킬지는 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채 이자비용 볼까요?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8조 2000억까지 불어났습니다. 4년간 연평균 13%씩 늘어났지요. 급기야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3% 초반에서 4%대 중반으로 치솟아서 재정 운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대규모로 발행했던 국채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94조 원 또 내년 98조 원 규모의 국채가 만기를 맞습니다. 향후 수년간 매년 100조 안팎의 차환 발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면서 금리 상승 압력 그리고 이자 부담을 키울 것입니다.

여기에 세입세출 불균형을 메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단기자금이 올해 1

월에서 7월에만 114조 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지요. 정부 재정이 쪼들리면 이것 적자, 즉 관리재정수지의 적자지요, GDP 대비 4%를 넘어섭니다. 재정준칙 3% 훌쩍 넘기게 됩니다.

입법의 사법부 점령과 침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법적 역량은 이런 곳에 쏟아야 됩니다, 입법적 역량은 입법부에게.

애먼 진정소급효를 발동해서 소급입법을 하고 그리고 예전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자를 새 법을 만들어서 처벌토록 하는 그런 표적형 악법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그 역량을, 그 시간을 이렇게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진입할 일자리 그 문을 열어 주고, 입구를 닫고 출구를 여는 게 아니라 입구를 열어 주는 일자리의 정책이 이어져야 됩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그물망을 갖춰 줘야지요. 회귀하지 않아도 현실에서 노력하고 도전해서 이제 개천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직장에서 임금을 받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현금 채굴이라고 하던데. 절망을 다시, 국정의 자원 배분 최우선 순위를 다시 조정해서 오늘도 쉬고 있음 40만 명에게 키워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또 다른 국정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렇게 재명무죄 그리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형사사법체계를 붕괴하는 무리수를 둘 게 아니라 무리해서 지금 수명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고리 2호기부터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키워드를 보여 드렸지요? 트럼프 뒤에 기업인들이 대거 도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기업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신재생뿐만 아니라 원자로를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대표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AI를 총괄했던 분이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두 명의 장관이나 배출을 했지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저는 나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인사가 돼서 새로운 기업 동력을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한 초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AI에 집중을 많이 했었지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AI를 먹여 살리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트럼프 뒤에 도열해 있던 그 많은 기업인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이 기업인들은 철저히 원전에 투자하고 원전에서 전력을 얻어 AI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신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에너지 믹스로 가져가야 하지만 반도체, 물과 전력을 필요로 하고 특히 더 많은 연산과 더 많은 상상을 해야 되는 AI의 반도체 특성상 전력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5일에 전체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논의하다가 심사를 다음 달 2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계속운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결정이 보류되니까 해체가 결정된 1호기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온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도 다음 달 중순에 임기 만료를 맞습니다. 고리 2호기는 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해서 23년 설계수명을 다하고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을 신청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원안위가 좀처럼

결론을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호기는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2017년까지 가동됐는데 2호기는 자칫 설계수명 40년만 딱 채우고 영구 정지될 처지입니다.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는 미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미국은 94기 중의 86기가, 유럽은 97기 중의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원전입니다. 반면 국내에는 설계수명을 넘겨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몇 개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영구 폐쇄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개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전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 2를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업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이제 그 가늠자가 되겠지요.

사실 처음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100조 투입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 하나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 AI 업체들이 사실 그 카드 하나를 구하질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 그리고 정부의 추진력 자체가, 이미 들어가 있는 AI 업체의 수준 높은 최고의 인력들이 합류해서 무언가 이루어 낼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전의 이 상태를 본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력 공백 사태도 우려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어렵게 건설한 원전을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멈춰 세우는 일은 더는 없어야 됩니다. 탈원전 시즌 1의 실패, 그 절망 그리고 국가의 전략산업의 암울함,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새로 오셔서 제가 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뒤늦게 파악했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오늘 증언감정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증감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위헌적인 악법입니다.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 원안은 부칙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헌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이처럼 위헌적 입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면 입법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은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즉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 버리기 위해서요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분노를 위해 법을 만들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법을 폐지해 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께서 위임한 입법권을 이처럼 사사롭게 남용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

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때로 보면 어떤 느낌이실까 궁금합니다. 특권 계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입법부의 권한 제지당하신 적 있습니까? 유불리에 따라 법을 갈아 치우는 것 중단되신 적 있습니까? 법 위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권력이 법치를 넘어서면 그게 바로 특권입니다. 저는 제가 반대를 위해 나온 이 국회증감법—이제는 수정안이라고 이야기해야겠군요—특권의 명백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보면 증감법 제15조 2·3항에서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게다가 4항에서는 국회가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에 개입하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또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입장을 가급적 증감법 원안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직전에 증감법 수정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증감법 수정 법안에서는 당초 운영위 소위,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제가 날짜로 소개해 드릴까요? 운영위 소위 상정이 9월 23일,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가 9월 24일, 법사위 상정 및 통과가 역시 동일한 9월 24일입니다.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에서 법사위 통과까지 이틀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소급효에 대해서 명백한 위헌 요소가 있음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이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위원님들의 답변을 제가 잠시 찾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충분히 제기되지 못했던바 여기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감에서 기관증인이든 누구든 증인을 불러서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사실 진실을 듣기 위함이다. 거짓말하는 거 듣기 위해 사람을 부르는 건 아니다. 작년에 운영위 국감 때 거짓말을 하신 분들이 있다, 국감에 나와서.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운영위 전체회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고발하는 거에 동의하신다면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르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저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동의하면 김현지 비서관 올 수 있냐고 했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진정소급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경우 이미 위원회가 종료된 상황에서 법안을 새로 만들어 처벌을 하는 표적 입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 또한 치명적인 독소조항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았으며 이 같은 준사법기관에 준하는 수사지휘권을 부여받은 것은 없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용하고 폭력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수사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수사의 비공개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명예훼손 문제 또한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침해 소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은 하늘처럼 무거워야 된다. 버젓이 거짓말해 놓고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적어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용감하게 자신의 안위보다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파 간에 생각이 달라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위증, 의도적인 회피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 구조를 바꾸자, 전체 국민들이 100%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민주당 위원님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특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증인의 위증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를 입법 공백이라 한다.

입법 공백이 아니라 이로 인한 법치 몰락이지요.

법에 입법 공백이 있어서 메워 가자는 것을 왜 국회의원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위증을 하고 싶은데 특위가 종료돼서……

이에 대한 발언을 정정하셨습니다.

위증을 했을 때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을 못 한다. 그래서 특위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왜 사법권 침해냐,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 내란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냐, 앞으로도 위증할 사람이 많은 거냐, 그래서 사전 차단하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위증한 사람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꾸준히, 진정소급효 그리고 국회의장 혹은 본회의에서 국회가 수사기관을 향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기간이 2개월 내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요청하고 사실상의 검찰총장처럼 준사법기관의 기능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항거였습니다.

현재 이 소급 규정은 제15조 4항의 개정 규정에 보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 소급한다는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개정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을 두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여된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한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소급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소급입법이 헌법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기본권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증을 엄하게 처벌하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처벌받지 않겠다라는, 기본권을 존중해 달라는 본인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는 증언에 대해서 묵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이 만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부칙 제2조에 따라 과거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있었던 경우만 한정한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찾아볼 때 어느 조항, 어느 규정에도 22대 국회에 한한다

라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증죄의 시효가 남아 있는 21대 국회까지도 당연히 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급을 한다고 규정을 해 놓은 거지요.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을 부칙에 넣어 둔 법을—그것도 부칙이지요—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건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을 만들 때도 형법이나 민법, 형법 사항에 있어서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법을 만들 때는 목적과 수단 그리고 내용과 취지에 비례의 원칙을, 또 이 사안이 지나치게 과하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법 원칙이라고 저는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법안을 봤을 때는 처벌을 위해서 남용금지라는 원칙을 어기고 입법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로 특히 특정 사건, 특정인을 전제로 한 소급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절차법에서 가장 신중하게 견지해야 될 원칙이 훼손된 것입니다.

또 하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을 때 16조 6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리결과보고에 대해 조치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 준용해 볼 때 또는 동일 법에 준용해 볼 때 굳이 보고를 받아야 한다면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위임을 하거나 또 위임을 하게 될 때 고발 여부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조치 여부는 저는 3분의 1 정도를 넣어도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묵살이 됐습니다.

15조의2 5항에 보면 원안에서는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본회의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토론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단순한 의결로 누군가의 원에 따라,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누군가는 위헌적인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님은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과거에 처벌받지 않게 됐던 것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다, 과거에도 실체적으로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공백이 있던 걸 메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본회의 직전에 ‘입법 공백이었다. 절차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소급효, 소급입법 2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제출이 됐지요. 어느 말씀이 진짜입니까? 소위에서 진정소급효에 따른 위헌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니다, 위헌 소지도 없다, 과거에는 처벌받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 범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의원님들 대답해 주십시오.

법을 처음부터 엉망으로 만든 거지요.

(「아니, 여러분이 이의 제기해서 빼 준 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목청을 높여 절규하듯이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 묵살하고 거수투표로 강행 처리한 뒤 너덜너덜해진 본회의 수정안으로 통과를 또 하십시오.

그런데 의원님, 이것 하나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오늘 수정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간의 연장 그리고 고발 조치 그리고 징계 요청

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축하의 인사를 필리버스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선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더니,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더니가 정확한 말이지요, 이 선출 권력 내에서도 서열이 있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제치고 사실상 국회의 검찰총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시게 된 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갑작스럽게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추미애 법사위원장, 간사도 투표소를 설치해서 부결시키고 그리고 입틀막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시켜서 온 국민에 의아함을 갖게 한 법사위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진행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그리고 위헌·위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그분에게 이제 국회 내에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지위가 부여된 줄 알았는데 제가 새벽에 내일은, 내일이 아니군요 이제 오늘이군요, 오늘은 또 다른 날이 펼쳐질 거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당초에 추미애 위원장이 수사기간의 연장, 고발, 징계 요청까지 모두 전권을 휘두르는 자로 수정안이 제출됐는데 그 수정안을 잠시 뒤에 또 고칠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 보셨습니까?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입법이 무슨 우리 손안의 공깃돌도 아니고 무슨 법안을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은 자연권리를 국가에 위임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안전핀을 보장받고자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한 겁니다. 그런 국회가 손바닥 뒤집듯이, 빈대떡 뒤집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고발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그 절체절명의 과제를 밤사이에 의장님에서 추미애로 갔다가 추미애에서 다시 의장님으로 간다고요? 법이 장난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이 사정변경은 어디서 연원이 된 것입니까?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이 부끄러운 한밤의 소동은 누가 어디서 발원한 겁니까? 의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소위에서도 전체회의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위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 중에서도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 듯한 위원님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소위에 들어간 후 그 위원님은 정회와 함께 입장이 겸손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입법안을 마련하고 또 그 입법안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단 10분만이라도 저희에게 토론 기회를 주셨다면, 단 한 시간만이라도 법사위를 멈춰 세울 수 있었다면 이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이 대명천지 25년 대한민국국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의장의 징계, 수사기간 연장 그리고 두 달 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으면 말씀드린 징계 요청까지 할 수 있다는 그 같은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는 것은 사법부 점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등 여야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그리고 절차는 절반은 반드시

민주당의 의도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의 의결정족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으나 이 또한 무위에 그쳤습니다.

수정안은 3분의 1이 아닌 과반수의 의결로 고발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 여부지요. 과반수면 지금 국회의 20개 상임위 중에 민주당이 과반이 아닌 상임위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20개 상임위 중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권력이 법치를 넘어서면 그게 바로 특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수사기간 연장 여부까지 입법부의 손에 쥐여 주고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 개입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은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시킨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시켰다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감법은 국회의 다수당이 검찰 놀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청을 뽑아내서 여의도에 심어 놓은 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입니다.

입법부가 사법의 권한까지 가져간다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삼권을 서열화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고 서열화시키는 것이 특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감법 원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 본문, 즉 위증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해 놨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 둔 겁니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한 위헌적 입법입니다. 이번에 소급입법, 위헌적 이 입법을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소급입법이 남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급입법이 반복되어서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폐를 입법부의 손으로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증감법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왜곡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무더기로 증인을 불러 놓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은 다음에 선택적으로 위증죄를 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금지라는 헌법의 한계까지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살생부를 만들어서 정치적 탄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인민재판이 더 노골적으로 더 잔혹하게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 주는 예고편입니다. 민주당은 동거녀를 폭행한 전과 9범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서 이미 허위 사실로 드러난 소위 연어파티 스캔들을 두고서는 멀쩡한 검사와 수사관을 불러내서 거짓을 사실로 바꿔치기하라면서 겁박하고 집단 린치를 했습니다. 이처럼 전과 9범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면 위인이고—의인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성실한 검사라도 민주당을 거역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반문해 보십시오. 만약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이 중 단 한 명이라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부터 민주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조리 증인으로 끌어내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나 보자는 심산으로 부모, 자식까지 털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티끌이라도 찾아내면 그 다음에는 권력에 줄 선 사정기관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배울 때 법은 정의를 담는 그릇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증감법이라는 그릇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직 복수와 증오 그리고 혐오만을 담고 있습니다.

PPT 하나만 현출해 주시겠습니까. 11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는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 야당과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만들었던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의 제1조는 정치적·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도의정치를 구현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 그 대상자는 1979년 3월 12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대상자로 국회의원, 정당의 당직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치인을 탄압하는 불행한 악법이 되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국회증감법과 신군부의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소급입법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어기고 태어난 위헌적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법이 닮았다는 건 두 법을 만든 집단이 서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젊은 시절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던 분들이 이제는 신군부를 닮아 갑니다. 김대중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전두환을 따라 하기, 민주당 의원님들 그 젊은 시절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던졌던 그 많은 짱돌 이제 본인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의 민주당 위원님의 발언 '국회에서의 증언은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 버젓이 거짓말하고 책임을 안 지는 길을 여는 건 직무유기',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헌·위법적 요소를 굳이 감행하며 증언감정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을 외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인사청문회에서 봤듯이 그리고 여러 선거에서 봤듯이 부동산을 규제하는 투기꾼, 성추행을 두둔하는 페미니스트,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낸 반미주의자, 제가 아마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일본산 제품을 애용하는 반일선동가, 이건 복수이시기 때문에…… 꽤 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물 마시듯 거짓말하지 맙시다.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생태탕 거짓말, 후쿠시마 핵폐수, 청담동 가짜뉴스, 최근에는 AI인지 음성변조인지 이용한 지라시 수준의 의혹 제기까지 어느 정당에서 나왔습니까? 직업적 음모론자, 가짜뉴스 유포자인 김어준에게 찾아가서 허구한 날 머리를 조아리며 이번에 출마했다고 이번에 당선됐다고 하면서 비루하기 짝이 없는

문안인사를 올리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지라시 수준의 잡설이 국회 회의장 안에 왔습니다. 이 지라시 수준의 잡설로 대법원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헌정을 유린한 당은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의 국회감정법은 입법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없이 위헌으로 점철된 법을 정치적 복수심 때문에 만든 겁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급입법의 위헌성은 헌법 제13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직전에 개정안 15조 4항 부칙 2조를 삭제했습니다.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현재 원안으로 본다면 국회증감법상으로는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원회 종료 후에는 관련자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위증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함으로써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 증인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조를 삭제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소급입법의 위헌성은 현재 수정안대로라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새벽에 일어난, 국민들께 부끄러운 수정안의 재수정안이 작성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바 이 2조가 다시 부활할지 혹은 국회의장님으로 주체를 바꾼다고 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다시 부활할지는 저 또한 현재 상태로서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지요.

삼권분립 위반의 위헌성, 개정안의 15조의2 3항과 4항입니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정안 15조의2 3항과 4항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이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수사행위에 국회가 관여하게 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마침 장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PPT를 부탁드립니다.

제4항의 징계 요구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에 반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추미애 위원장에게 수사지휘를 하도록 부여한 법안입니다. 특히 징계는 검사에 대한 징계, 국회의장이든 위원회든 징계 요구 권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협의를 했다면 이 조항은 대안을 내기가 어려웠던 조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인을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해 보지요. 2개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를 징계하라고 국회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수사를 2개월 내에 끝내라는 거지요. 만약 이 법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혐의국정조사특위에서 증언을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22대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던바 무한 소급의 악영향도 우려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이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간 뒤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 차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지난 운영소위에서—이분 개딸한테 찍히실까 봐 존함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모 위원님이 '수사기관이 본회의장 안에 와서 제대로 보고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본회의장 안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가려 토론을 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더더

욱 불가능하다. 이는 형식적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차라리 본회의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 법안 보완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위원께서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함에 따라 이 같은 수정 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른 법체계하고도 충돌이 됐었지요. 제가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국정감사법안입니다. 국정감사법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국회는 소관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결국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교섭단체대표들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적어도 여야가 함께 협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둔 겁니다. 그런 국감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 입법, 무책임 입법, 아마추어 입법이 나온 거지요.

제가 잠시 후에 위증의 여러 가지 경우의수를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이는 이미 활동기한이 지난 위원회에서의 위증을 추적해서 소급해서 처벌하는 법안이고 오늘 터무니없이 다른 수정안이 또 나온다면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으나 국회 내에서 기한이 지난 위원회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 그리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청문회 또한 가짜뉴스를 제기하는 증언보다 더 치명적인 위원의 질의, 증인을 하나도 두지 않는 경우 혹은 아예 위증을 할 수 없도록 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해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같은 위증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인 의회가 강력한 조사권을 갖는 나라기 때문에 청문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봐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선서하에 이루어지는 공적 진술로 간주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 공공질서의 보호와 국정 신뢰 유지를 위한 장치로 작동을 합니다.

미국 연방법 제18편에는 두 가지 핵심 조항이 존재합니다.

첫째, 1621조는 위증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적 선서를 마친 후에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선서한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된 진술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1001조는 거짓 진술, 폴스 스테이트먼트(false statement)입니다. 거짓 진술에 관한 규정으로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정부 또는 의회의 기능을 방해하기 위한 허위 진술, 문서 조작, 사실 은폐 등을 포괄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연방기관 또는 의회 조사 과정에서 문서로 제출된 진술이 허위일 경우에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최대 8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증 또는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법안과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정헌법 5조 자기부죄거부권

(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입니다.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회에 출석한 증인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나는 수정헌법 제5조를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위증죄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진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즉 증인은 답변을 강요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침묵을 선택할 자유를 가집니다. 만일 이러한 권리가 무시된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 또한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술 면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인은 수정헌법 제5조를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으나 그 대신 진술 내용은 형사소추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면책을 받은 이후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의회의 진실규명을 위한 강력한 위증죄 처벌규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진술인의 헌법적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는 이중적 구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권과 시민의 자유권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며 헌법적 질서 속에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역시 국회에서의 진술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강화 여부를 논의할 때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법적 구속력, 증인의 권리 보장, 적법절차의 정착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이고 진실의 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법이겠지요.

프랑스와 다른, 터키도 준비를 했지만 대조적으로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헌법과 법률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는 썼습니다.

중국에서의 입법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입니다. 이른바 전인대지요. 그 상설기구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존재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사실이지요. 입법·사법·행정 각 권력은 당의 지도하에 일원화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의회 내에서의 위증, 즉 고의적 허위진술에 대한 법적 처벌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적용 범위와 실효성이 서방국가들과 크게 다릅니다. 또한 진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제도적 장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선 중국 헌법 제307조는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형사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에서 증인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서 진술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형량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 중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로 사법절차에서의 증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입법기관 내에서의 진술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위증죄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처럼 선서하에 증언하고 위증을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가 중국의 입법기관에는 사실상 부재합니다. 이는 중국의 의회가 정치적 심의기관이 아닌 형식적 절차의 통과기관으로 작동함을 반영하는 겁니다. 위증죄 적용 자체가 사실 법률상보다는 정치적 통제 일환

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자의적으로 위증의 개념을 규정하고 위증죄로 기소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증감법이 갖고 있는 위헌 요소인 겁니다.

또한 진술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중국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에는 형식적으로 자기부죄거부권—미국에서 수정헌법 5조에 따른 것이었지요—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명시적인 제5조 이퀴벌런트, 묵비권의 보장은 불완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오히려 이게 진술 의무를 강요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118조에서는 피의자나 증인이 신문 과정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진술 거부나 묵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및 청문 절차에서의 진술은 강압, 고문, 협박 등 불법적 방식으로 인해서 확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중국 내에서도 일부 법학자들이 이러한 절차에 헌법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의 진술 역시 독립적인 진술 규명 기능보다는 정치적 정당화 또는 기존 결론에 대한 지지 명분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이나 조작이 문제되더라도 공식적인 위증죄 적용보다는 당내 징계나 정치적 책임 추궁의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위증죄 제도는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실질적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의회 내 진술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합니다. 동시에 진술인의 권리 보장은 헌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으며 제도적 장치 또한 부족합니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계 속에서 국가기관의 진실성보다 정치적 일체성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법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되지요. 법의 지배 또 권력의 통제, 사실 늘 조화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진술인의 권리 보장, 적법절차의 실질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증언감정법 또한 저는 철회돼야 된다, 다시 한번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양한 위증의 사례와 함께 어떻게 헤징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저의 지역구는 백현동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백현동 판결이 이루어진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앙에서 화제가 되고 또 그 아픔이 여러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시급한 해결이 주민들께 다소간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백현동은 그 아파트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주변을 걸어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될지는 많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연구원의 용도지역 변경,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도했지만 잘 안 됐거든요. 그것이 이곳은 용도 변경이 잘 안 되던 곳이었습니다, 녹지지역이니까. 사실은 적어도 집을 지을 수 있으려면 준주거지역 정도는 돼야 되는데 꿈쩍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인섭입니다. 200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었고 또 2년간 지역구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도 식품연구원의 부지가 주거 용도가 가능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하우징기술이라는 부동산회사를 2015년 1월에 설립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성남시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 줬습니다, 이제 주거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네 단계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향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여러 의혹을 받습니다. 백현동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업자에게 소송을 벌이고 또 성남의 인허가를 받아 내는 것은 김인섭 같은 최측근이 아니면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소문까지 더해져서 나중에 수뢰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를 확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김인섭이 아니라 2021년에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지역 감사를 나갔던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함께 질의응답을 했던 초선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백현동 사건을 오늘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증에 대한 처벌을 엄히 해야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무게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 민주당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 대표적인 위증을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증감법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위증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떤 역사를 남겼는가 한번 되짚고 이 같은 비극이 혹은 이 같은 패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으로 새기기 위함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역시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알고 있었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네 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줘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비슷해서 문제입니다.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예외를 탄생시켰으며 그 민의 주머니로 수백억 혹은 수천억의 이익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의 최종결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면 이재명 경기지사였고 민의 최대 수혜자, 최대 수익자들은 이재명 시장 혹은 경기도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합작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협작입니다. 그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이분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백현동 개발 관련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는 제목의 패널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아니,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발언 제지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상한 허위사실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해 드릴까요?

(「의원님, 발언 취소하십시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의원이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했습니다. 그 패널의 제목은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 그 스티커에는 '조작'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그저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는 게 질의였습니다.

지금 친절하게 판결문을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질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발언, 설명발언, 정리발언을 하나의 답변으로 이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원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되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심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발언을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 확정입니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미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조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특혜를 준 것이냐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하나의 연결된 발언으로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나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가 제시한 패널, 질의 모두 백현동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이 부분 백현동에 집중돼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서두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그 근거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구체적인 조문인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 사건 의무조항인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에 기재된 이 사건 패널을 시각자료로 준비해서 제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고 협박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피고인은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다. 즉 피고인은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 전체를 통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고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의 이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겐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안 되니까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법률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유일하고 다른 법률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말한 법률이란 곧 이 사건 의무조항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시각자료인 이 사건 의무조항이 기재된 패널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하였다.

즉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언급하면서 국토부의 요구가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강제력이 따르는 요구였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 말은 곧 뒤에 이어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말과 합쳐져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전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강제된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법리에 대한 재판부의 분석은 백현동 발언에서 주로 당시 이재명 지사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두 발언입니다.

이 두 발언에 주시를 했고 발언의 내용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대한 진술이다. 둘째, 그 표현 내용이 증거가 있다. 셋째, 그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대한 압박 또는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이것을 도외시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걸로 잘못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심,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의 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허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사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PPT 현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3번 내 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에서 성남시와 국토부에 요청해 받은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문건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문건에 대한 설명 이전에 재판부가 밝힌 원심 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른 사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입안 제안받은 내용이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를 거쳐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

2.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성남시가—지금 보내 드린 2014년 11월 17일 문건입니다—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한 데 대해 국토부는—오른쪽의 12월 9일이지요—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공문에 분명하게 회신하였다.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일심 법원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들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진술을 했습니다. 모두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이후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법리에 비춰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성

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상위계획 부합 여부, 성남시 공공기여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공표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하여 피고인은 성남시장인 자신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1번과, 2번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제기되었던 특혜 의혹 및 이에 결부된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아직 판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면소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판결문에서 백현동 발언이 문제가 됐던 그 위증과 관련해서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증감법과 마찬가지의 증감법을 적용해 고발을 추진합니다. 이 같은 위증에 대해 이번 증감법에 대해서는 지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전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하고 위증 고발의 주체는 위원회가 이미 활동기한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해당 증인을 고발하고 2개월 내 수사가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그 막대한 권한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법안에 비해 심대하게,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고발 권한을 갖고 이 발언을 고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상임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의원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을 엄정하게 처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바 위증에 대해서는 국회가 손을 놔야 되겠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 토론을 계속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국토위에서의 국정감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성남시 공무원들의 발언이 제기되고 공소장에 적시되자 국토위에서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제기합니다. 2022년 당시에 벌어진 상황은 공히 국민의힘 위원과 민주당 위원 사이에 벌어진 내용이므로 균형 잡히게 배분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입니다.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에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민주당 모 위원께서 당시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백현동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당시 지사지요—‘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귀 시에서’, 즉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린다’고 보냈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토부는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제나 협박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2022년 검찰 공소장에도 보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그와 관련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별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위원의 즉각적인 의견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를 할 경우에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을 침해 안 했는데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 도정에 대한 정책감사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되도록 발언을 자제하고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서범수 위원이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위, 다른 데도 아니고 국토교통위 감사 때 허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위증 차원에서 고소나 고발을 검토하자는 건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에 제기한 것도 아닌 의사진행발언으로 짚은 부분이니 따로 다른 트랙으로 위증 고발을 해야 되는 사유이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민주당 위원님의 발언은, 지금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위증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 중에는 재판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즉 이것은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국회는 국회 일을 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공소유지는 공소유지대로 하는 거지요.

당시 민주당 위원님은 당시의 발언만 가지고 위증이라고 결론을 내고 국토위 차원에서의 감사요청, 고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을 갖고 위증이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지금의 오늘 국회감정법을 보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닐 거라 돌이켜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압박은 당사자의 증언이,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2013년, 2014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통령 주재회의나 국토부가 당시 부동산 관련 TF, 협의를 했을 때 스무 차례 진행이 됐는데 이걸 압박으로 느끼지 않으면 지자체장이겠습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국감 때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위증이다 아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위원님이 솔직했다고 봅니다. 준사법기관만큼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면 함부로 판단하는 자의적 판단을 거두겠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했다고 믿고 싶은데요. 그러나 다음 답변을 보고 저의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지난 국감이나 내용 갖고 감사요청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은데 정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느꼈다라고 하면 압박이 맞지만 그걸 압박으로 느끼지 않으면 지자체장이겠습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의 논리로 하자면 지금의 국회감정법 수정안은 정쟁 유발법으로 이름을 고쳐야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법에 미비가 있어서 혹은 절차에 미비가 있어서 소급 입법을 해야 했다고 했던 그런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앞에서, 헌법 주체인 국회의원 앞에서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이 명백하게 위증일 경우 위원회 차원의 권한으로 고발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신경이 쓰여서, 느낌이 오지 않아서 혹은 정쟁이니까라는 이유로 극히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개념 정립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이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임위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재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누군가를 고발하고자 할 때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 의석수를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고발하는 게 가능한 구조라고 보십니까?

어제저녁에 긴급히 다시 뜯어고쳐 올려 온 법안을 보면 고발 주체를 정하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이는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국민의힘에서 고발 주체를 정할 수 있는 그 협의의 가능성 자체가 제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당의 정파대로, 그 정파의 의도대로 누군가를 먼지가 나도록 털어 보자 할 때 누가 견제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국회의원에게 검찰총장하라고 위임을, 권한을 줬습니까? 누가 국회의원에게 수사기관처럼 수사지휘를 하라고 역할을 부여해 줬습니까?

과잉입법입니다. 위헌입법입니다. 비례의 원칙 모두 다 어긴, 법이라 할 수 없는 이 악법을 두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 법의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던 그러나 당의 방침에 따라 짧은 휴식 기간 뒤에 다시 소위로 돌아오면서 침묵으로 돌아선 그 위원님이 지금도 고심하시고 많은 의원님들과 같은 고민을 나눠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증감법인데 다른 고발이지요. 이런 증인은 어떻습니까? 증언 자체의 위증은 시간이 걸릴 것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증인으로 전과 5범,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를 불렀습니다. 조경식 씨는 언론상으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전과를 찾는 데 그리 힘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씨가 검찰개혁 불쏘시개로 되고 있다고 뜨고 있는데요. 저도 검찰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검찰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나름의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활동에 비하면 굳이 크게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검찰 해체는 오히려 검찰에서 서로 권력기관 간의, 사정기관 간의,

수사기관 간의 핑퐁과 무모한 경쟁과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질주가 과열 양상을 빚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며 먼지 가루 날리듯이 그들의 질주 속에 정말 약자인 서민들의 민생과 수사는 어디로 갈까요?

제가 나중에 돌려차기 피해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한정 늘어나는 수사기간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게 남 탓을 하는 떠넘기기 때문에 실체는 사라지고 오로지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그 의지만 강렬하게 표출됐던 청문회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지난 4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인생에 '특' 자가 많습니다.

조 씨는 2021년 사기 혐의로 구속돼서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자유를 되찾은 지 8개월 만에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43살 동거녀 A 씨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싼 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 깨끗하게 잊겠다는 내용의 자필각서를 쓰고 A 씨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 씨의 마음이 금세 바뀌었다고 합니다. 15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흉기를 들고 다시 A 씨 집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간 조 씨는 귀가해 주차하던 A 씨에게 다가간 뒤 A 씨를 차 안에 밀어 넣고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이후 조 씨는 A 씨를 위협해서 A 씨의 집으로 들어가 '경찰 부르는 순간 너는 죽는다', 지난 A 씨가 조 씨를 못 이겨 떠난 날인 1월 9일 이후 '내가 악에 받쳤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은 너랑 나랑 마지막 날'이라고 말한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조 씨는 이때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A 씨를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아 놨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A 씨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이후에도 A 씨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는 A 씨 집 지하주차장에서 또다시 A 씨를 만나려고 기다리며 열두 차례 전화로 위협한 사실도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사기전과만 9범에 절도와 장물 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전과까지 있던 조 씨는 A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이 됐지만 이내 일명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일명 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조 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 모 위원은 '국민 여러분, 지금 잘 봐 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라고 조 씨를 환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 씨는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 씨 발언을 발전시켜서 민주당은 검찰 추가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이름이 왜 이렇게 깁니까—조 씨의 발언을 근거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한준호 위원장은 KH그룹 부회장 조 씨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면서 이 사건이 당시의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정치검찰

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받아 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함께했던 위원들이 검찰 압박 거들기에 나섰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했던 서 모 위원은 조 전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갈등 끝에 증언을 결심한 만큼 조 전 부회장의 법사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늘 국회의원은 증언을 마주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끊임없는 진실과의 사투지요.

저는 검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갖고 있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과 9범의 사기꾼은 의인이고 검찰은 악인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단순 도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의 근거와 기준이 입법의 일관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높입니다. 힘들고 혼돈의 세상이지만 입법부에서 중심을 잡아 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민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상당히 위원들의 사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 사건이 위원들에게는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마 재판의 경우에도 지난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서 행위조항을 삭제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시 면소가 되게 하거나 대법관을 증원해서 30명에서 100명, 그런데 소위를 통해서 30명으로 줄였지요. 대법관을 증원해서 아예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죄로 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올라가서 4심제를 채택해서 진이 빠지게 시간을 들이게 해서 이미 여권에 의해서 포획당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손에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거나, 법 왜곡죄로 검사가 용기 있게 기소를 할 경우 혹은 법 왜곡죄로 판사가 용기 있게 민주당, 여권 측에 유죄를 선고한 경우 판사와 검사 자체를 그 같은 죄로 포획하게 하는 여러 장치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선거법상의 면소가 가능케 하는 행위조항 삭제 그 법안은 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국회 증감법을 막판에 수정안을 냈던 민주당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하면서 가장 타격감 있게 이 같은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든 부분은 대북송금의 수사 검사와 대북송금에서 연어와 짜장면을 먹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는 그 정황을 압박해서 만드는 게 오히려 가장 실효성 있는 입법부에서의 공격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의 법사위 상황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지난 9월 22일에 박상용 검사와 법사위원들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요. 제가 발췌와 요약에 오류 없도록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의 발언입니다.

예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김용 정도는 되어야 측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문회에 나온 민주당 위원님이 김용 씨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이시

지요, 민주당 국회의원 분이. 또 그날은 추미애 위원장이 여기 계신 나경원 의원님 포함해서 세 명의 발언권을 빼앗고 그 안에 열 명이 넘는 분을 무력으로 그리고 과잉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한 직권 남용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날입니다.

신동욱 위원의 발언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파행을 유도해서 국회의원 세 명의 입을 막았는지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 막고 민주당에서 발언권 집중적으로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방금 발언하신 신 모 변호사님, 여기 김 모 민주당 위원님과 함께 김용 씨 변호인 아닙니까? 김 모 위원님 존경합니다만 과거에 김용 씨 변호인이셨잖아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자들 변호인들 죽 나오시고 변호인들끼리 이렇게 나와 주고받고 김용 씨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들려고 사법개혁 청문회를 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국회 청문회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사실상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오전 중에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바라시는 건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권을 집중적으로 줘서 후배 검찰들 압박해서 '그래서 너희는 개혁해야 돼'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기 앞에 솔직히 많으신데 이재명 대통령 과거 변호인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양심이 있으시면 이런 청문회 스스로 회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는 국회의원도 변호인이시고 답변받는 변호사도 김용 변호인인데 두 분이서 주고받으면서 수사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 이게 무슨 검찰 청문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나오신 증인인데요. 추미애 위원장님은 야당 국회의원 뒤에 방호원들 죽 세워 놓으시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바통은 주진우 의원이 받았습니다.

국회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무슨 절차적인 보장이 됩니까? 민주당에 적대적인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면 입 막아 버리고 발언권 뺏고 말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 가지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중요한 청문회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시작됩니다.

박상용 검사님 나와 주십시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 말하는 것도 명분으로 내세운 게 겨우 전과 9범인 조경식의 증언입니다. 절도, 사기, 잡범. 그렇게 수감 많이 하고 수사 많이 받아 봤으면 수사 체계를 잘 알아서 수사 개혁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말 듣고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수년간의 재판에 수백 명의 증인을 부른 이화영 재판을 다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겁니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는 6억 대선자금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지나서 대법원 판결 직전에 이심까지는 다 유죄 된 상태에서 대법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변호인들끼리 증인 신문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이화영 800만 달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이고 굉장한 문제인데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 전부 다 힘을 합쳐 이화영 부지사 감싸고 오히려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 지금 검사를 닦달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왜 800만 달러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살아 있었을 때 평양을 다녀오지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는 그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 당시에는 부지사였지요, 부지사를 통해서 그리고 쌍방울이 800만 달러 대금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하면서 북한과의 교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쪽에서 본다면 사실은 적성국인 국가에 현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국무부 나아가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이심까지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보고받았느냐 여부가 판결문에 적시가 되거나 아니면 그 같은 사안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대장동·백현동에 비해서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이화영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연어와 짜장면을 먹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다라는 주장과 함께 청문회를 열고 공세를 편 것이었지요.

다음 진행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로 이 연어·짜장면 얻어먹은 날을 여권에서 특정을 한 모양입니다.

주진우, 제가 이화영 증인에게 계속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연어·술 파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부지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연어·짜장면 얻어먹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실토를 했다는 것이 웃깁니다. 날짜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17일로 특정이 됐지요. 그때 연어·술 파티 있었습니까?

증인 박상용, 없었습니다.

주진우, 연어·술 파티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지요?

증인 박상용, 그렇습니다.

주진우, 제가 법무부 보니까 재소자 2명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재소자는 들은 얘기들을 같이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재소자가 무슨 직접적인 증인이 됩니까? 거기다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 했지요?

중인 박상용,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때 연어·술 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증인 박상용, 없었습니다.

주진우,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교도관이, 40명 넘는 사람들이 다 허위로 증언했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재소자 말 듣고 또 이것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사건을 사전·사후에 다 보고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었습니까?

증인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재판에서 국민들 볼썽사나운 부부 싸움이 있기 전에 몇 개월간 제가 봤을 때

는 그 자백이 유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입법부에게 사법부의 권한까지 다 준 것은 혹은 준사법기관의 역할까지 부여한 것은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입법부에게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증인들도 그리고 나오지 않을 증인들도, 위증할까 봐 아예 0으로 처리한 청문회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저수지의 수장들처럼 관문을 지키는 게이트 키퍼들을 하나하나 입법부에 두는 행위는 저는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 쓰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800만 불 사건을 사전·사후에 다 보고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었다, 그 자백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어졌다고 하지요. 이 진술을 확보하게 된 계기는 또는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계기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가 증거를 제출한 데 따라 영장을 발부했고 국정원 문건—즉 증거가 국정원 문건입니다—입수된 국정원 문건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채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문건을 알려 줬을 때 그 국정원 인사를 어떻게 아냐 했더니 친분이 두터운 친인척…… 이 같은 결정적인 자백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마치 강력범죄에 있어서 범행 도구를 알려 주는 것처럼 800만 불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청문회에서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회증감법에서, 증언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9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25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이 기관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지 못할 것이라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이름에 대한 인지는 진행이 된 상태였지만 기관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적잖이 난감한 것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8년 국정감사가 재개된 이후에 청와대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일은 제가 보도자료와 그리고 그 당시의 속기록을 봐도 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당연한 총무비서관의 출석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대응은 하셨는데 저는 그때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증원 및 청문회, 무소불위로 대통령을 갈아 치우고 '대법원장이 누군데?'라는 취지의 당대표 아래에서 국가 의전 서열, 국가 서열 관계없이 국회로 불러들인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용산의 1급 비서관 앞에서는 쩔쩔매시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위증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증인을 불러 세우지 않으려 했다면 김현지 비서관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해 왔던, 동고동락한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측근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출석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모로서 대통령을 모시는 도리이고 오히려 실세나 김현지 비서관이 만사형통의 만사현통으로 불려서 불필요한 오해와 세간의 주목을 받아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온당한 처사이자 그 도리에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저희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건이 달리면 달릴수록 위원들이 총무비서관에게 느끼는 위압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위원이 공방 끝에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의 경우에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비서실장이 대신 총무비서관의 예산, 살림살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김현지 비서관이 세구나, 대통령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구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더니 임명된 간접 권력에도 대통령실 내에서는 확실한 서열이 김현지 비서관 아래로 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불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증언은 그렇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함부로 밤사이에 뚝딱 수정안을 만들고, 그 수정안도 내키지 않아서 또 새벽에 엉터리 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위증이 그렇게 가벼웠으면 처음부터 이 법을 만들지 마셨어야지요.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은 0명이었습니다. 배추농사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희대의 배추 테크, 배추 총리라는 닉네임이 생겼던 의혹이었지만 여야는 누구도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위증과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드렸던 가짜뉴스의 추억이 있습니다. 성주 사드 전자파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드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과학이 입증되는 것이 지난하고 힘든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사드 배치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은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참석해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면서 괴담에 동조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부는 7년이 지난 2023년 정부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530분의 1 수준으로 사드기지는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후쿠시마 괴담이 이어 터져 나왔지요. 후쿠시마 괴담은 정치가 과학이 아닌 것임을 압니다마는 과학을 입증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드에 이어서 두 번 절감하게 했습니다.

절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핵폐수라는 말이 그 음모와 그 조작으로 국민의 삶이 피해를 보고 희생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1조가 넘는 돈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해명하고 또다시 재해명을 해야 되는 데 쓰여졌습니다. 국회의원님 돈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을 갖고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위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중요한 위증의 심각성을 안다면 가짜뉴스부터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지요.

2023년 6월에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인천 장외집회에서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 불러야겠다면서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한때 처리수로 표현할까 하다가 중립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그 지적과 함께 처리수로 변경 없이 오염수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의 공식 논평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핵폐수 용어가 더 자주 쓰였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제목이 '핵폐수 홍보대사 자처하는 정권이야말로 국민에게 있으나 마나 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입니다. 대변인의 브리핑은 '핵폐수 방출, 괴담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원자력 학계에서는 핵폐수 용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힘을 앞세워서 몰아세우는 주장에 학계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익명으로 때로는 실명으로 사실을 알리고자 애썼으나 여기 제가 인용하는 분들의 용기와 의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학술적으로 본질을 잘 나타내면서 혼돈의 여지가 없는 용어를 써야 하는 것이 특히 오염수와 관련한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다른 색깔을 입히려는 건 정치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교수는 맞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따져 묻는 수준조차 필요 없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끝까지 갔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이 배출 기준 미만의 오염처리수를 방류한다는데 그걸 주변국에서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나라면서 과학적 본질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신이 없으니 온갖 선동을 위해 있지도 않은 핵폐수 표현까지 가지고 나와 새 프레임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났고 세월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치 찌꺼기가 가라앉은, 그래서 분리된 맑은 물처럼 국민들에게는 다시 맑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투여된 그 많은 세금이, 시간의 낭비가 이제 다시는 거듭되지 말아야 할 가짜뉴스에 대한 대국민 경고를 보내 준 것이라고 위로를 삼고 싶습니다.

이제 입법부가 사법부를 점령하고 사법부를 침탈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학계와, 또 어떻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PPT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찾아봐 주실 수 있다면 부시맨을 찾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콜라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일보 기자님의 칼럼에서 제가 부시맨의 콜라병을 봤습니다.

우리가 정치 용어에서도 사실 전체주의국가로 가는 길목에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는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국민에 대한 또 국민주권에 대한 오용이자 오만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화 포스터는 '부시맨'입니다. 콜라병이 난데없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자신의 목적지를 가다 떨어진 이 콜라병을 보고 주민들의 궁금증은 증폭이 됩니다.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이 물건을 어디에 쓸고 하니'라는 그런 어법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콜라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기로 삼아 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음식을 누르는 데 사용하거나 콜라를 들고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주민분들의 혼란과 또 이 낯선 물건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는 갈등도 그리고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는 했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 콜라병이 국민주권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혼선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오용의 사례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국민주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 헌법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실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 그 헌법 시스템을 정해 놨습니다.

저희 입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법안을 만드는, 단지 위임을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도록 저희가 행동대장으로 일하면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한다?

여러분들의 국회의원 임기 4년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6년입니다. 대통령 5년입니다. 우리의 임기 4년입니다. 왜 그것을, 임기를 맞춰 놓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과 권력 견제 균형을 위해서 서로 긴장감을 갖고 임기에 임하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주운 콜라병처럼 이것도 국민주권이고 저것도 국민주권이라면서 자신의 권력의 오용을 위해서 국민주권을 활용하지 말라는 거지요. 국민이 헌법에 대한 시스템은, 4년 임기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을 헌법과 일치하려고 한다면 저는 크나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논리에는 헌법적 오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권력의 서열이 있고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을 본질로 하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적 명령, 즉 헌법의 권력분립 질서와 선출된 4년짜리 국회의 입법 의사를 동일시하는 오류입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의 의견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며 입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직접 설정한 국가시스템의 기본 설계에 따라 실행계획을 짜는 겁니다. 국회가 실행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률을 헌법과 동일시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위험한 발상이지요. 국회의 입법 의사가 주권자의 헌법 의지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건 두 글자로 하면 독재, 네 글자로 하면 입법독재입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범죄자 주권 정부', '재명무죄' 이 같은 말이 나오면서까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부를 두고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에 속한다고 10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또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후자로 해석한다면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에 직접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4년짜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독립과 권력분립 질서를 법률로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번 국회증감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입법권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권한이지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권한이 아닙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보셨습니다.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입니다. 이번 증감법도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기회는 허용되

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합니다. 만약에 법률로 이것이 허용된다면 일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수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삼권분립 그리고 헌법정신을 이야기할 때 함께 이야기를 듣는 이인호 교수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대통령이 던진 선출 권력 우위론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험한 이론입니다. 대통령은 제66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제69조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권력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의 헌법재판소가 두 번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재판소 우위에 있음에도 탄핵을 당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 자체가, 대통령의 말이 형용모순인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중대한 지적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법률로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말을 깔기 위한 밑자락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설계자가 국민인 것처럼 동등한 지위에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협업하고 운영돼야 됩니다.

사법 개혁의 미명으로 추진 중인 법률안 내용 모두 권력을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폭력에 해당됩니다.

외부 인사의 법관 평가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합니다. 법관을 위축시켜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증원하려는 것도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허영 연세대 교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작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협박하는 것은 군사시대 포함한 77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사법권 침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공세 또한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부터입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지 공격받을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심 재판만 2년 2개월이 걸려서 법정 재판 시한을 넘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헌법과 법률상 책무입니다. 더욱이 국운이 걸린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유무죄를 밝혀서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위적인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위헌적 제도와 협박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명무죄를 위한 것이겠지요.

대통령이 사법부 억누르기에 성공하면 대통령은 살아나겠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쓰러질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더 늦기 전에 대법원장 수장인 사법부를 입법부가 침탈하고 점령하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학계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논거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권의 한계 그리고 정당성이 명확히 구분되기 위해서 오늘 국회증감법에 대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숙의와 그리고 숙고를 요청드립니다.

박성호 박사의 논문을 제가 발췌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 그리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과 법률의 실현을 위한 기본 원리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법치주의의 원칙의 실현 원리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규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에 대한 권한은 국회의 전속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권한으로 인정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의한 입법권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정당성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어 행사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감법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법·국정감사법, 협의에 따라 고발 주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 같은 법체계와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비례성 원칙에도 모두 위배가 됐습니다. 또한 입법의 내용은 입법권을 위임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 증감법의 두 고발, 제가 아까 이제 지난 정부 인사들의 활동기간이 끝난 위원회에서의 증언을 이유로 소급 적용하는 증감법의 고발과 이미 법상으로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증이 명백한 당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을 주저했던 국회에서의 어제와 오늘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안정성과 일관성은 국민의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저희 국회의 역량으로 지탱됩니다. 구성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경우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수정헌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기본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인간적인 권리마저 이 증감법은 확보해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절차에 대한 정당성,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입법 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법 목적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입법권의 행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행사되어야 되고 올바른 법, 정의로운 법으로 그제서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을 많이 만들어서 뭘 하려 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 반듯한 법, 올바른 법 그 이전에 증감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법·위헌의 악법의 증감법을 철회하는 것부터 입법부의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국가 권력은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 권리의 보장이 일차적인 것입니다. 형식적 효력이 존재하는 법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법을 전문가들은 진정한 법치주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 집단의 도구로 쓰이는 형식적인 법의 효력은, 권력의 주관적 의지에 의한 입법은 합법성이나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빙자한 폭력행위임을 논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는 동기에 대해서 초반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96년에 정치부 기자로 또 93년에 사회부 기자로 제가 발을 디디면서 만났던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후배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입법과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는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회고했으면 합니다.

80년대의 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지금 25년의 법은 괴기합니다. 그러면 시계를 90년대로 되돌려 제가 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말과 육성 회고록을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읽어 드리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가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조건에 대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라고 묻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사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저주받은 땅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잃어서 식민지가 되었고 분단이 되고 전쟁까지 하는 등 온갖 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한다면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저주라는 말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능동적이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의식이 결여된 패배주의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식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지정학적으로는 크고 중요한 나라입니다. 나는 늘 도랑에 든 소는 양쪽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늘 의회주의자로 사시는, 통합의 정치를 역설해 왔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오늘 국회증감법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궁금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원동력’이라는 제하의 대통령 회고록의 답을 보면 ‘나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고난의 그 길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는 한반도는 세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의 국익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외교의 중요성을 정치의 가장 큰 덕목으로 강조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것은 잘못하면 고칠 수 있지만 외교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이 망해서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것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도 따지고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조선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외교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에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있었는데 전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였습니다. 대신 미국은 주변 삼국과 달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고 영토적 야심도 없었습니다. 조선이 이러한 점을 간파해서 미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미국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기한 사이 그러나 사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지배에 대한 인정을 받아 냈습니다. 결국 조선은 망했습니다.

이는 주변국과의 외교를 잘해서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난 태국의 사례와 비교됩니다. 태국은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잘 파악했고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했으며 자국의 독립이 상대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켜서 결국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대원군은 내정은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실책을 했습니다. 쇄국정책으로 우리가 세계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외교가 중요한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교의 중요성을 모르고 관심도 적습니다. 외교를 잘하는 정치가가 드뭅니다. 이 점을 매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취지의 연설을 들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2개의 파고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파고를 뚫고 갈 수 있을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외교와 안보, 국방에 우리의 절대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최근의 관세협상 때문에 그리고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똑같은 비망록인데 누구는 3500억 달러 현금이라 하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출, 보증, 차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었던 한 날한시에 팩트시트 없이 구두 합의로 더 이상 합의문이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는데 이제는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들였으면 IMF 수준의 위기가 왔을 것, 혹은 미국의 요구대로 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접합니다.

외교는 타이밍이자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합의입니다. 합의되지 않았다는데 합의했다 말을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만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접촉하는 것이 소중하며 그만큼 외교 행사에서 상대방의 정보와 상대방의 근황을 탐색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동선과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북중러의 대륙과 한미일의 해양국가 간의 이분법적인 국제 정세의 파고 속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잘한다고 마냥 따라 할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위기와 위치를 잘 살펴야 된다는 전략적 접근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교란 상호 간의 신뢰가 근간에 깔려 있어야 동맹도 되고 그 동맹 위에서 안보

협력, 경제 협력의 시너지가 가능합니다.

상호 신뢰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세 번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토 참여입니다.

나토는 그동안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많은 나라들이, 일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사적 협의를 함께 안보적 통일로 이뤄 내는 협력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계속 출석해 왔지만 정식 회원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참석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안보·국방 역량 때문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한 원자로의 경우에도 납기일을 반드시 맞추는 기술력과 끈기로 인해서 상호 간의 경제 협력을 애타게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호주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호주의 경우는 그동안 나토와 국방·방산 협력을 해 왔던 관계로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은 사실상 사막과 다름없는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토, 호주와 함께 몇 년 전 붉은등과부라고 하는 장갑차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장갑차라 하면 탱크와 함께 전 세계를 호령했던 독일과 함께 협력을 해 왔던 호주가 대한민국에 문을 열어 줬다는 것은, 아마 그게 한화였을 것입니다. 한화의 기술력과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보 그리고 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한화가 막판까지 독일 업체와 겨뤘을 때 아무도 한화의 승리를 점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반세기 넘게 호주가 구축했던 나토와의 협력은 단단하고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토 참여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통해 나토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도 가지 않아서, 또 하나는 중동 사태 때문에였습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더 가야지요. 일본이 가지 않으면 더더욱 다른 정상과의 회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저는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이 성사되지 못했던 것도 두 번째의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늘 APEC과 같은 또는 유엔과 같은 다자회의에서는 주최국 정상이 주재하는 만찬의 경우 세계의 유력 각국 정상들이 모이고 주최국 정상과의 만남의 기회가 짧게나마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세협상이 우리의 턱밑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잠시나마 촉각을 다투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며 정상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유감입니다. 정상회의 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모이고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유엔과 같은 다자회의의 경우에 100개가 넘는 워낙 많은 회원국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원들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 또한 몇 개월이 걸리는 지난한 일정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 만찬장 동일한 시각에 이재명 대

통령이 만났던 사람은 그날 만찬이 아니더라도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그러나 정상 간의 만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만찬의 아쉬움을 더 크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유엔총회에서의 좌석 곁 의자에 사우스코리아라고 하는 한국 이름표를 봤습니다. 아마 또한 여사의 개별 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 간에 함께 풀지 못하는 딱딱하고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회담도 영부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지금의 관세협상은 우리에게 위급한 과제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기회는 바로 정상회담 첫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3500억 달러, 우리나라와 미국의 말이 달라지는 데에서 불안해합니다. 협상의 큰 고비를 넘겼다, 흡족해하는 회담이었다는데 조지아주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조지아주에서도 그리고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그리고 지금 서로 다른 MOU에 대한 해석 차이를 놓고 양국 간 갈등, 분열, 민주당 의원들의 반미 발언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핫라인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핫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의 보통의 수행 인원은 대통령과 외교부장관 그리고 외교안보 보좌진들이 함께 일정을 진행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비서실장의 위치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책상을 함께 잡고 상대방을 향해 무거운 눈빛을 보내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가 아니라 용산의 아무도 챙기지 않은, 대통령을 대신한 일을 챙기는 것이 비서실장의 임석 자리여야 합니다.

보통은 TPO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적합한 인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잇따라 나왔던 볼펜에 대한 선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는 자화자찬은 우리로 하여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외교를 입증해 줄 것을, 그 역량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에서 많이 레스 프라미스, 모어 퍼포먼스(less promise, more performance)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약속은 적게, 성과는 크게 내라는 거지요. 사실 외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빚는 역사이고 외교도 얼굴색이 다를 뿐 사람이 신뢰로 빚어내는 역사의 산물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비주류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친중·친북에 대한, 혹은 약간의 반미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같은 인식에서 관세협상의 이 어려움을 마치 내치를 하듯이, 국내 정치에서 돌파하듯이 국내 정치용의 반미 몰이를 하거나 국내 민주당 친명 인사를 동원한 거친 논평은 한 자 한 자 빠짐없이 보고되고 체크되고 신뢰의 잣대로 계량되고 있을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총구를 뿌리치기 힘든 정치적인 현실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압니다.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이 또한 김어준이라는 유튜버와 함께 민주당의 삼두정치라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독한 정치와 고독한 국정 운영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군대, 미국 가기 전에 했던 발언입니다만 외국 군대의 주둔 이 말은 성남시장 때

도 나왔던 말입니다. 금리, 신용이 좋은 자에게는 금리가 낮은 것보다는 오히려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금리가 낮아지게 해 주는 것이 잔인하지 않다라는 발언은 몇 년 전 대통령후보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연을 빌려 했던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으로 이념과 진영, 강성 지지층의 청구권, 기득권 노조의 요구 그리고 유튜버의 여러 가지 극단적인 메시지로부터 오로지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만 바라보게 조력을 보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홀로 뛴 듯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이 어떤 기사로 또 어떤 사건으로 비쳐졌는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의장님?

○의장 우원식 예.

○김은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아니, 화장실 가신다고 그러더니……

김은혜 의원님, 화장실 다녀오신다고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시고.

○김은혜 의원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의원님이 제대로 못 주무셔서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세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국가권력을 행사를 할 때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재난 상황에 대한 정치적 활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국가 위기를 즐기지 말아야 되는 지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출된 지도자는 심판을 포획하고 정적을 매수하거나 무력화하고 게임의 법칙을 바꿈으로써 권력 세계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시도는 언제나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제주의로의 흐름이 항상 경고등을 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죽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는 민주주의의 수호가 때로는 민주주의 전복의 명분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민주주의가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뒤늦게 깨닫지요. 변화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특히 1969년으로 가 보면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를 위한 재선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임기 연장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위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은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주의 독재자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권력을 자주 남용합니다. 전쟁과 테러는 그 기치 아래 군중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권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극적으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9·11 테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3%에서 90%로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는 갤럽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의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아마 국가비상사태에서 90%의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에게 맞서고자 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001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 애국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11 테러가 한 달 전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절대 통과하지 못할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시민들 역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제주의 조치에 더욱 관대해집니다. 특히 개인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9·11 테러 이후에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인 응답자 중 55%는 테러 방지를 위해서 시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97년도 설문조사 때의 2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만 공습에 따른 미국 사회의 공포가 없었다면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결정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인 중 60% 이상이 일본계 미국인을 나라에서 추방하는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억류 조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헌법은 국가 위기 때 행정부 권한의 확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시에 쉽게 권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중된 권력이 잠재된 독재자의 손에 넘어갈 경우 상상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집니다.

비판자에게 공격을 받고 민주주의제도가 행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는 선동가에게 위기란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정적의 힘을 빼앗을 기회입니다. 선출된 독재자는 실제로 이러한 위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외세 위협에 직면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종종 합법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릴 기회를 모색합니다.

잠재적인 전체주의 지도자와 국가 위기가 결합할 때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일부 독재자는 위기 국면에서 권력을 차지하지요. 예를 들어 후지모리 대통령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게릴라 폭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1992년 자신의 쿠데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정당화했을 때 페루 국민들 대부분 그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에 후지모리 대통령의 지지율은 81%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싶은 PPT가 있습니다.

독일 의회 화재를 혹시 틀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PPT 현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2년 8월에 제가 통일을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동독은 저의 연수, 연구의 중심에 있었고 그중에 불에 탄 베를린 의사당이 제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히틀러의 독재정권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인용하는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의 어윈 루처라는 신학 박사는 그를 법과 신과 그리고 독재자의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히틀러의 독재정권은 워낙 독일 국민에게서 초반에 폭넓은 지지를 누렸습니다. 우리를

매료시키지요. 아마도 역사상 그런 독재자는 없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 국민들에게 받은 지지만큼은 말이지요. 그는 어떠한 한 민족이 자신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레닌이나 모택동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대중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반면에 히틀러는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중산층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과 그리고 교수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낸 것입니다. 이른바 히틀러형 햇볕정책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 칼 융은 전 세계가 놀랍도록 시선을 끄는 국가 사회주의의 강력한 현상에 도취됐다고 했습니다. 23년에 바이에른 정부를 전복시키는 히틀러의 극적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그는 뮌헨에서 정치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의해서 무산됐고 그의 부하 중에 16명이 숨졌습니다.

그는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란츠베르크 교도소에 수용이 됐는데요. 그때 그의 깨우침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과정을 통해 권력을 얻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권력을 잡는 데 이용했고 권력을 얻었을 때 그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는 독재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1925~1929년 이 기간에는 실업 감소와 소매판매 증가로 경제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독일공화국은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치당은 거의 소멸했지요. 그러나 히틀러는 세계 정복의 열정을 가슴에 불태우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상황이 그런데 나빠지기를 기대한 겁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1929년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히틀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만연했으며 분노와 불신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가 혁명적으로, 전쟁이 아닌 헌법적 수단으로 국가를 점령할 때가 된 겁니다.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은행들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은 전쟁배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폐업했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자리와 품위 있는 생활을 빼앗기고 굶주림으로 황폐해진 독일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기꺼이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히틀러에게 이때가 황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귀와 표를 얻었습니다. 1933년 3월, 지금 보고 계시는 독일 의회 바로 여기서 전기이자 계기가 마련됩니다.

히틀러는 선거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위기를 조장하기로 했습니다. 1933년 2월 27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 의회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증거는 방화를 가리켰지요. 그런데 학설의 논란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의회 건물의 방화가 우연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히틀러가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산당원에 걸었던 조작인지.

왜냐하면 이곳에서 범인으로 잡힌 마리뉘스 판데르뤼버라는 네덜란드 사람은 공산당원입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측근과 경찰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상황을 전파할 기자들이 때맞추어 기다리고 있었지요. 범인을 잡는 것을 마치 알고나 있었던 듯 말이지요.

학계의 중설은 히틀러의 사람들이 마리뉘스라는 네덜란드 사람을 난방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통로를 통해서 건물에 들어가도록 강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구로 위협해서 건물의 지하실에 불을 지르도록 하였고 곧 거대한 구조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

다.

히틀러는 방화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국민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령에 서명하도록 파울 폰 힌덴부르크 독일 대통령을 압박을 했지요.

나치들은 영장 없이 집을 수색했습니다. 재산을 압류했고 이에 반대하는 집단 회의를 금지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폰 힌덴부르크는 바이마르헌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 대통령은 히틀러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헌법이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수권법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의회에서 여전히 과반수를 얻지 못했지만 살인과 협박 그리고 회유를 통해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표를 얻었습니다. 헌법에 유효한 의석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불리한 선거 판세를 인위적인 방화로 뒤엎어 버리는 것. 어쩌면 국가 지도자는 넘실거리는 지지의 유혹에서 국가의 위기를 활용하거나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모든 입법 기능은 제국 내각, 즉 히틀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권력도 양도가 됐지요. 이제 독일은 의회가 아니라 히틀러가 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7월 14일 그는 나치가 독일의 유일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마주한 경제 안보의 파고는 이럴 때일수록 깊은 혜안을 요구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대표는 '양키 고 홈'과 제국주의를 외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떠나서 나라를 위한 선택은, 안보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복원 및 강화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요. 또한 정상 간의 합의와 예산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지요.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었는데 전략산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원전, SMR입니다. 그런데 SMR 중에 소듐냉각기술이라는 SFR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 회장이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많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빌 게이츠와의 만남을 기쁘게, 반갑게 이어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 당시 빌 게이츠가 꺼낸 의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한미동맹보다는 빌 게이츠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백신, 원조, ODA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워낙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서 재단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1달러씩만 지원을 해 줘도 그들에게 컴퓨터와 휴대폰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IT산업의 전도사이자 ODA의 혁명적인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 게이츠가 사실 미국에서는 자신의 회사를 차려서 SFR, 소듐냉각기술이라는 SMR의 기술 개발에 단독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AI 기업들이 지금 원전으로 먹고삽니다. 소듐냉각기술, 원래는 원자로가 뜨겁기 때문에 식혀 줘야 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소듐으로 사실 원자로의 열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고도의 첨단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24년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즉 R&D를 위해서, 혁신 기술

R&D 예산을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90% 삭감이 됐습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그러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시네요. 한미동맹 전략 협력 사업이 삭감이 아니라 숙청 수준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잘라 낸 예산이 25년도 4조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해 놓고 성장하라고 하면 정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박씨 심으러 오라는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미국과의 전략산업에서 저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AI에 100조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에서, 네이버에서 AI 총괄을 했던 지금의 대통령실에 가 있는 총괄수석과 그리고 네이버 출신 두 명의 장관과 그리고 원자로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실은 풍력이지만 해상풍력보다 원자력에 더욱 집중하고 공력을 들였던 두산에너빌리티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산자부장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관세협상에서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재부 출신 그 장관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인공 AI 산업 육성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원전 없이 이룰 수 없기 때문이지요.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그래픽카드를 포함해서 쓸 수 있는 연산능력을 감안한다면 보통의 컴퓨터 그래픽과 다른 수백 배의 전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 연기지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가총액을 1위부터 10위를 뽑아 볼 때 AI 기업이 얼마나 진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논의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시장은 압니다, 이제 다시 탈원전이구나.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조속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해서 23년에 설계 수명을 다하고 가동이 중단됐지요. 수력원자력이 수명 연장을 신청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원안위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지요.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100년까지 늘리겠다고 미국은 하는데 벌써 94기 중에 86기가, 유럽은 97기 중에 69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원전입니다. 반면에 국내에는 설계 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운전 결정을 내려야 할 원전이 고리 2호기만은 아닙니다.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10기에 달하는 원전이 2030년까지 줄줄이 운영 허가가 만료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믹스를 천명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시즌2을 시작한 건 아닌지 원전 업계가 불안한 시선을 항상 겨누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가 우려가 되는데 블랙아웃도 남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전을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 멈춰 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아까 진행을 하면서 사실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민생에서는 아마 이분들이 수사에서 기한도 마냥 길어지고 그리고 핑퐁 때문에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역량은 오늘과 같은 증감법이 아니라 약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 같은 방향으로

공력이 집중돼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10분만이라도, 단 하루라도 토론을 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 같은 바람은 좌초되고 이뤄 내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올해 초 기사를 검색하다 발견했던 이분의 이야기는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오늘 소개를 좀 해 봐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부산의 돌려 차기 피해자 기억하시는지요? 가명으로 김진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8살입니다. 이분은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했고 부실한 수사로 인격적인 권익을 침해당한 것을 얘기하며 현재의 정부조직법에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맞섰지만 국가는 부실수사가 없었다고, 정신적 피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에서 이뤄졌는데요. 부산 돌려 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첫 변론기일이 7월에 열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진주 씨, 가명의 김 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전과 18범 이 모 씨가……

그 당시 사건을 소개해 드리자면 22년에 부산 진구 서면에서 10분 넘게 쫓아가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했지요. 그 범인 이 씨는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수사 초기에 경찰 등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한 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김 씨가 사건 당시에 입고 있던 바지 안쪽의 유전자정보를 다시 검사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재판부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씨 혐의가, 즉 범인 이 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기는 했습니다.

김 씨 측이 얘기한 경찰의 문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입니다. 또 관련 증거를 폭넓게 수집할 기회를 놓친 점입니다. DNA 감정을 부실하게 진행한 점 등도 지적을 했습니다. 범죄피해자로서 국선변호인 선임 등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보복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피해자는 두 번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첫 번 피해도 악몽이었는데 마주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보복심리를 자극하면 가해자가 원고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기에 이릅니다. 실제로 가해자 이 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 씨에 대한 보복을 예고해서 구치소 독방에 30일간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어떤 인터뷰를 보셨다면 내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날 거라고, 이 악순환이 멈춰질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정신적 고충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지금 검찰을 기능적으로 분해를 해서 굉장히 많은 청으로,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국수본, 일일이 위원회를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놨지만 저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약자를 위한 수사는 지금도 지체되고 있고 지금도 담당

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수사는 없었고 보복 예고 역시 가해자의 행위일 뿐 부실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사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보장받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수사기관 간에 서로, 사실은 수사지휘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기관 간의 갈등이 문제입니다. 핑퐁도 문제지요.

(「김은혜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양측은 수사기관 매뉴얼 제출을 놓고도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김 씨 측은 강력범죄 수사 매뉴얼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각 수사기법이 팁 형태로 모아져 있는데 대외비라서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씨 측이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법에 통용되는 일반 규칙을 지켰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힘없는 피해자들은 이 같은 일을 하나하나 다 챙기기에는,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그 긴 시간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재력이 있는 분들은, 범죄경력을 지우고자 하는 분들은 사실 이같이 많은 위원회와 이같이 많은 수사기관을 펼쳐 놓으면 오히려 힘 있는 사람에게만 더욱 힘이 쏠리면서 자신의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피해자들은 시간과의 싸움, 변호사를 구하면서 자신의 재정적 압박에서 더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권력만능주의가 어떻게 숨죽이고 있는 약자를 힘들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오늘 우리처럼 증감법으로 인한 국회의 삼권분립과 그리고 헌법의 정신에 따른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와중에도 민생시계는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이재명 정부가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현장이든 노동자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현안이자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88%의 젊은 청년들의 권리 또한 반드시 구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위주의 법과 제도가 우선이냐? 많은 논란 속에 있지만 저는 오늘 저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해 드리면서 정부는 기득권 노조의 편만 아니라 노조가 아닌 다른 젊은이들의 아픔과 미래와 안전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정부는 원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민간기업에 사실상 폐업 수준의 강력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산재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곳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155명에 달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33명, 한국도로공사가 30명, 코레일이 10명입니다. 같은 기간에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사망자를 봤습니다. 5명이었더라고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DL이앤씨 13명, 현대엔지니어링 9명, GS건설 8명, HDC현대산업개발이 8명, SK에코플랜트 일곱, 삼성물산 다섯. 사실 다 합쳐 봐도 한전이나 도공의 산재 사망자가 같은 기간에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갔지요.

저는 여기서 민간기업이 적고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약하게 내리라는 그런 단순 도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명령과 그리고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정부의 행정은 늘 일관되고 공평하고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느 순간 신중해지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상품으로 치자면 범용성을 갖고 언제 들어도 안정적인 메시지가 가능하지요.

산재 사망이 발생하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시 묻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기관장, 즉 장관이나 사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자체가 폐쇄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문 닫기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하필이면 정부가…… 이번 지난 민간기업에서의 사망사고 이후에 그 기업 산하의 공사장들은 100군데가 넘게 멈춰 섰습니다.

저는 사람의 목숨값은 민간기업과 공공이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노조의 경우에도 그 노조의 권익과 노조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들의 권익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침은 공평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란 정부가 공공에도 더 강력하게 칼날을 들이대겠다 입장을 천명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재가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가 제재 대상에서 사실상 비켜 왔기 때문입니다. 산재와의 전쟁이 유독 기업만 겨누는 구조가 반복되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일단 우리 사회는 책임질 희생양을 찾지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재발방지나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아무래도 책임질 자 누구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추적을 하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지요.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잊혀집니다.

문제점은, 사실 대통령이 '철저하게 원인 파악해서 개선책을 내라'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면허 취소를 얘기하는 바람에 작업장이 스톱이 됐지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면허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껏해 봐야 영업정지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영업정지의 사례도 많지가 않았지요.

산업별 위험도가 다른 건 통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100일이 넘으셨으니까 조금은 가라앉혀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처벌을 지시하고 처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마치 원님이 죄인 다루듯이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이실직고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두려움에 입을 닫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많아질 겁니다.

열차사고, 코레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을 때 열차사고에서 희생된

작업자분들이 나이가 갓 20대 후반, 서른 살이었습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웃으며 떠났던 아들이 갑자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느낌을 받은 부모님들의 황망함은 뒤로하고라도 작업자들의 방향에 문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인도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량이 오면 차량을 마주 보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뒤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다가 차량에 의해서 어이없이 희생이 됐습니다, 두 분이. 많이 다치셨고 여러 분이 숨지셨지요.

이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건설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한 압박 이전에 사실은 철도 내부의 인력 구조라든지 인력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장을 모면하겠다는 것보다는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 작업자들이 당연히 건너편에 있는 철로를 걸어야 되는데 그 철도를 걷지 못한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나중에 밝힐 건데 그건 코레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작업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때까지 분석했을 때는 인재였습니다. 또 관리감독 부실과 허술한 안전체계인데 철도현장 산재도 알아보니까 255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만 최근 5년간에 사망자가 10명에 달합니다. 다른 공공기관 산재도 민간 수준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이제 정권이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오히려 진지하고 총력적인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기업에 과징금 부과, 경영진 해임, 처벌에만 매달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전은 달라지지 않았고 똑같은 비극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사고는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만으로는 사실은 이 사고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코레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가 어렵겠지요. 올해 상반기 KTX와 일반 열차 승객이 7200만 명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는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재 책임이 기업 소유주에 있다고 본 대통령의 발언은 철도사고의 책임이 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에 있다는 그런 화답으로 되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관세 협상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안전과 그리고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층인 기득권 노조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에서 벌어진 사고는 장관,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코레일에 대해서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감독기관' 이런 말보다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2조에 대한 보완과 협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증감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이 가진 독소 조항으로 며칠 전부터 이 법에 대한 조율과 협상의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장표를 하나 꺼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수지의 수문장?'이라고 적힌 장표입니다. 제목은 '심판 매수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부에 지나친 사법부 점령의 힘을 주게 될까. 제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봤을 때 심판 매수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심판 매수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국가들이 공무원과 일반인의 잘못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법기관을 운영하는데 가령 법원과 검찰, 정보기관 그리고 국세청, 규제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러한 제도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기관은 잠재적인 독재자에게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심판이 매수가 되고 경기의 룰이 바뀌어진다면 우리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헌법정신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 영역을 지키는 저수지의 수문장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 성남의,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수문장을 맡았습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지요. 특히 유독 대북송금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의 도약이 눈에 띕니다.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조금 전의 법무비서관까지 하면 벌써 이 장표에서만 4명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었지요. 변호사비 막대했을 텐데 지금 이분들의 약진이 시작일지 아니면 보답일지, 대북송금 담당 이승엽은 헌법재판관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고사했지만. 선거법 위반 담당 이태형은 민정비서관 또 선거법 위반 담당 전치영은 공직기강비서관, 대북송금 담당 이장형은 법무비서관, 대장동 담당 조상호는 사법제도비서관 후보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분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가를 어떻게 다시 화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특별히 낯 뜨거운 보은 인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이승엽 변호사를 선택했다면 정말 큰 일 날 뻔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이 상황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큰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치열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왜곡죄는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이 돼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이 같은 법사위에서 사실 그렇게 장문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내렸던 논점과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회를 위해 수사기관 무고죄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렇게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 법왜곡죄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를 할 때는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 적용하겠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구성요건을 나중에 보니까—‘구성요건’입니다—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이건 사실 판사가 하는 겁니다. 구성요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같은 로직이 짜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 처벌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지요.

과연 이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났다 그러면 그 무죄가 났을 때 검사를 처벌하겠다 그런 조항 아닐까요?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법원의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면 법률 적용을 왜곡해 가는 것이라 처벌하겠다는 거지요.

검찰의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수사와 기소권이지만 이런 무력화하는 처벌조항을 사법 체계에 새로 넣겠다는 시도를 했던 거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법안의 경우에도 이 같은 해프닝을 겪으면서 법사위원장에게 고발 권한을 줄 정도의 용의라면 적어도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해서 국회의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고 민주당이 밝혀 온 만큼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까지 숙의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는 법사위를 정상화하고 민주당의 말 그대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실천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의 감정법을 철회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자는 게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헌정사에서 늘 그래 왔지요. 이게 국회 정상화 차원이고 또한 민주당의 요구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지요.

권력도 자꾸 그렇게 많이 드시면 나중에 체합니다. 권력 독식의 부작용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지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요청드리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고발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건 됐고 너네는 수사나 받아라고 비웃는 것은 그거는 국회의 품격이 아니지요. 통합, 협치의 약속이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종교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모두발언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스타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난제가 던져졌었고 그 난제에 대해서 매끄럽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트루스 소셜에서 깜짝 놀랄 말들을 던졌지요. 다행히 잘 복원이 돼서 북한 문제, 평화 문제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거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판에 ‘잭 스미스’라고

미친 특검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통제가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만 결국 나와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화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봉권 띠지 특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외친 거 아니었나요? 수사 지시나 마찬가지지요.

두 번째, 사실은 묘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갈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그 시간에 중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특사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중에 중국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이 대화에 오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은 말을 합니다, '나도 그 비행기에 같이 타서 가고 싶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그 대답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신 것 같았고 비교적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미정상회담 후에 그쪽의 공화당과 미국 내에서 함께 이 같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분위기를 탐문하고 진행했던 분들의 얘기는 그 비행기에는 중국으로 같이 가자가 아니라 이렇게 절체절명 위기의 시기에 대통령의 중국행은 미국과 사전에 상의가 되거나 아니면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안보 측면에서 같이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는 같이 안 간다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전략적 사고로 한미동맹을 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물론 미국으로 가시는 비행이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모든 방송매체가 거의 다 전승절 행사를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보다 앞서 말씀하신 김장겸 의원의 고발이 사실이라면 방송사의 팔을 비틀어서 생중계하자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관들이 굉장히 전보를 신속하게 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미국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감안할 때, 미국과는 그러나 피를 나눈 동맹으로서의 안보의 확신은 세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주한미군을 이야기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이야기하고 전작권 전환을 관세협상과 거의 초반에 함께 꺼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란 우리 군 자체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안보와 방위역량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안을 마치 예전의 반미시위처럼 촉발할 수 있는 말로 화답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지요.

평택에서의 주한미군기지의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소유권을 달라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중국과 연결이 되고 서해에서의 우리의 얼마 안 되는 독보적인 항구로서의 평택항에 대한 미군의 소요가 분명히 있고 수요로 원하는 비즈니스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 같은 의제가 사전에 얼마나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미정상 후에 나온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칭찬 일색이었고 자화자찬 일색이었으며 그 같은 협상 결과가 나중에 관세협상에 불리한 대답으로 또 갈등으로 비쳐진 것은 앞으로 조율이 돼야 할 그런 상황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권이야 이리저리 바뀔 수 있지만 한번 파괴된 국가 시스템은 재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광란 속에서 사법부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의 수호자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대한민국, 사실은 국민의힘이 부족함이 많아서 많은 분들에게 좌절과 또 아쉬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신을 대변해 주는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느낄 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또 보수에서 이야기해 주는 정책은 쓰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살기 힘들고 팍팍한데 공짜가 없으니 열심히 일하라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것처럼 밍밍하고 재미없는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아껴서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해야 되고 또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또 고용유연성이 있어야 고용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또 대중에게 진정성 가기 위해서 쓰디쓴 말을 계속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보여 드릴 수 있는 장표는, 오징어게임 장표가 있으면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사실 다수결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릿수로 권리와 자유를 압박하면 제가 아까 국가가 행사하는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했는데요.

헌법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안은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 원칙을 규정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77년간 유지해 온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입법을 하려면 사실 제가 부족하게 얘기했던 야당도 대화 상대로 그리고 국민과 입법과 정부와 숙의가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입니다.

다수결이 사실 저 오징어게임3에서 보듯이 '죄송하지만 죽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효과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지요. 마지막 수단이지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속도전으로 해치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오늘 이 법안까지 포함해서 정 대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보셨지요? 검수완박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제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데 행안부 아래에 둔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난립하는 수사기관을 통제·지휘할 국가수사위원회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지 또 수사권의 중립성·독립성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경쟁으로 권력 앞으로 가 권력 앞에 충성할 때 어떻게 국민에 대한 수사를 담보할 것인지 또 형사소송법 체계하고 충돌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

다. 현 정원보다 더 많은 16명을 증원하면서도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요즘 줄어드는 추세 왜 말씀을 안 하시지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 대거 임명으로 사법부를 손아귀에 쥐려는 것 아니에요?’라는 것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 겁니다.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오늘 같은 입법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사법부 의견수렴을 또는 사법기관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선거법 개정 문재인 때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배제하고 정의당과 손잡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셨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회 운영이나 선거에 관련된 법을 야당과 협의하지 않는 것은 몰상식을 넘어서 민주주의 게임의 룰을 어기는 겁니다, 마치 과반수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의 룰을 폭력에 의해서 주도하는 것처럼.

하물며 사법부를 흔드는 입법을 여당 단독으로,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면 그것을 바로 네 글자로 하면 입법독재라고 합니다. 다수결이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이성적 토론과 설득, 숙의 과정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도 쓰러집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위헌적 포퓰리즘 입법, 헌법에서 기각된 무리한 탄핵 숫자 기억하시고 이제 집권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과 현실감을 함께 갖추고 야당도 도와드릴 것 드리고, 그렇지만 아직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위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여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염치와 양식, 관례와 전통, 모든 미덕을 다 집어던진 무한 극렬 투쟁이 이번 필리버스터 통해서 양당 의원들에게 함께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기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은혜 의원 밤새워 가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문금주)

(10시10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문금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하는 의원 있음)

왜 늦게 들어와서 박수예요? 제시간에 들어오지.

○문금주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서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 14시간 정도 시간상으로 보면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같이 날을 새면서 제가 들어 보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재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제한토론에 대해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토론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정파적 목적으로 시간 끌기로 악용된다면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와 같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마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시점에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확인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목을 묶인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해」 하는 의원 있음)

예, 저도 오늘도 우리 지역에 면민의 날 행사도 있고 하는데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만 다들 아쉬워하고 좀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의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은 무슨 죄가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의장님 또 사무총장님, 부의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여기 속기사 여러분,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런 아무 말 대잔치나 듣자고 이 전파를 낭비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국민들한테 자꾸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끔 혐오감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뿐입니다.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버 관련, 국회법 관련 규정들을 좀 손볼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힘에서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버를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압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버를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고생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나는 당연히 국힘 소속의 주호영 부의장님도 사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부의장님이 사회를 안 보면 그것은 의장, 부의장으로서 효용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사회를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필버 신청은 재적의원 3분의 1로 돼 있는데 종결은 5분의 3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종결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무기명투표로 종결 표결을 하는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필버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같이, 안이 나오면 의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국회에 이렇게 발목이 묶여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랄지 지역에서 해야 될, 또 의원님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정파적 싸움으로 개혁 법안은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특히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국회증감법은 국회의 권한을

되찾아서 위증을 단죄하고 국회의 감사기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저도 관료 출신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면 또 국정감사도 받아 보고 하면서 증인 선서를 하면서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가급적 공직생활 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답변, 진실된 답변, 했던 일에 대한 답변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최근 공직자들 하는 행태를 보면 국회 무시가 이건 도를 너무 지나친다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곧 있으면 드러날 내용도 바로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회의 권능·권위가 이 정도까지 무너질 수 있느냐, 참담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 국무위원들 심지어는 그 국무위원들과 함께 배석한 공직자들 행태들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너무나 의기양양하니 자세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질의에 아주 너무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또 고압적으로 답변하는 행태를 보면서 같은 공직자로서, 관료 출신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법을 강화해서라도 시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법 관련 법안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말씀드린 국회의 권위를, 권능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동참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에도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볼까 정말 심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존중하나 그것이 정파적으로 악용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심정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안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가 그저 글자가 아니라 과거 수많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반복되었던 위증과 거짓 그리고 그로 인해 방치되었던 국민적 진실을 되살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국힘당의 김은혜 의원님이 여러 말씀 주시고,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큰 지도자감으로 생각될 정도로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은 별로 없었다.

특히 김은혜 의원 본인은 윤석열 정권 핵심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로서 전 국민의 듣기 시험, 듣기 평가를 했던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사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국정농단의 시작이 아니었냐.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런 분이 여기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을 가르치시듯이 하는 그런 언사를 보면 정말 듣기가 민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왜 이 자리에서 긴 시간 발언을 이어 가려 하는가, 제가 원래는 오늘 4~5시간 정도, 네다섯 시간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앞서 김은혜 의원이 저의 시간까지 너무 많이 빼앗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법안이야말로 국회가 스스로의 권능을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제가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찬성 발언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61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조사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와 공직자의 위법 부당 행위를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나면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도 수사 지연, 불기소 처리로 이어져 결국 진실은 묻히고 국민의 분노는 더해져 왔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법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증도 문제지만 자료제출도 요즘에는 정말 불성실하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불성실하게 제출된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핑계 대고 영업상의 이익침해, 경영상의 비밀 이런 핑계로 자료제출도 아주 부실하게 했던 게 국힘하고 연결됐던 이전 정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내리쳤던 우리 국회의 위상과 권위와 권능을 이 법을 통해서 좀 더 되찾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특위 활동이 끝나면 증인 위증 사실이 드러나도 고발할 위원회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2018년 5월 17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데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의 증언을 두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고발은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회에서의 위증 고발, 소추의 적법 요건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개정안 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들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이 직무유기하는 경우와 특위 종료는 위증 면죄부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앞서 김은혜 의원이 이거를 다시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낸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도부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최종 고발 주체가 누구로 될 것인지는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 대상 기관의 확대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고발은 검찰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변화된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독점과 직무유기를 방지하고 보다 다양한 수사기관의 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수사기간 기한 준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은 고발 후 2개월 내에 검찰이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개월 내 종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간보고 없이 기한을 넘긴 경우 국회는 해당 기관의 장을 불러 해명을 요구하고 나아가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가 실질적으로 수사 지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위증에 대한 고발, 그래서 수사로 이어져서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그동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회 증언 관련 위증으로 기소되었으나 절차적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 공소 기각이 확정된 사례가 적지는 않습니다. 반면 일부 사건에서는 기소 유죄판결이 나오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국회 위증 사건이 형사처벌로 확장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에 22대 국회에 들어서 아무래도 내란 사태 여파로 개원 10개월간 128건의 고발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위증은 한 10건 정도 그리고 불출석이 107건, 동행명령 거부가 12건으로, 위증의 경우는 10건인데 어찌 됐든 그동안에 역대 내용으로 보면 22대 국회에서 좀 늘었습니다마는 수사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이랄지 불출석을 해도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증인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수시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출석도 안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결국 현실을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반복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증인들께서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위증을 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그런 현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실 겁니다.

또 국회가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던 현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다수의 대기업 총수들과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발언 상당수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위증 고발은 지지부진했고 검찰 수사는 느리게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청문회를 쇼라고 냉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2007년 BBK사건 관련 청문회에서도 당시 증인들의 위증 논란이 컸습니다. 증거와 상반된 발언이 나왔지만 국회의 고발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지난 1월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국정조사 발언도 특검을 통해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 조사권은 무력화되고 국민은 진실을 알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위증은 단순히 한 증인의 잘못된 증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자체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검찰은 수년씩 사건을 끌며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흐지부지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정권실세와 관련된 사건들이 고발되었지만 기소 여부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국회에 보고하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입법권자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정안이 단순히 법조항 몇 개의 손질이 아니라 국회 조사권의 실질화, 국민 신뢰 회복, 권력형 비리와 위증 근절을 위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기 위한 우리 국회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 및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명의 고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위증 등의 죄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증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법 공백이지요.

이는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위증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관행을 암암리에 심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게 될 청문회나 각종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에도 제대로 된 실질적인 조사나 감사, 청문회에서의 검증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는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위증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진실이 묻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위증은 그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둘째, 이 법안에 고발 대상기관을 확대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가 위증 등을 고발할 때 대상기관이 검찰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년 뒤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하고 국가수사본부 또 공수처, 이러한 수사 환경이 변했다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정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 집중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중수청까지도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대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기한 엄수 및 중간보고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법은 검사가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실 규명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수사를 무기한 지연시키는 관행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진실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 법안은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기한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행 여부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중간보고 없이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경우 국회는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위증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흐르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책임 있는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줍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고 행정부에 수사기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책임성을 묻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이처럼 꼼꼼하고 실효적인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회의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은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개의 손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조사권의 실질화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헌신이며 권력형 비리와 위증 근절을 위한 민주주의의 방어 장치입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될 때 국민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희망을 잃습니다. 위증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을 볼 때 국민은 정의가 멀리 있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그 절망의 고리를 끊어 내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우리 국회의 몸부림입니다. 다시는 국회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조롱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는 위증한 자들이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법의 엄중함 앞에서 떨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곧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진실을 추적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제 선언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어떤 기관도 어떤 고위공직자도 어떤 권력자도 국민적 진실 앞에서 거짓을 말할 자유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법률 조항의 변경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조치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어지는 발언에서 왜 위증이 민주주의의 적인지, 왜 검찰에게만 맡겨 둬서는 안 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버를 신청한 국힘 의원님들은 한 분도 본회의 좌석을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듣지는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발언한 국힘의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던데 협치를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타협을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인 야당, 진정한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란과도 단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국힘당하고의 협치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내란과 종식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그래야만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들에 동조하는 국힘과 어떻게 헌법과 법률 앞에서 협치와 타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귀를 처막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 극우 보수의 환호에 너무 들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 증감법 개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사례인데요. 내란국조특위에서의 한덕수, 최상목의 위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버젓이 위증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특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고발의 주체가 없어 특위 결과에 따른 정당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장 올해 열렸던 한덕수와 최상목의 내란국조특위에서 지적된 위증 행위도 같은 이유로 고발될 수 없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기간을 정해서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특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조에서 위증이 있었거나 위증죄를 고발할 사람이 있음에도 고발 주체, 즉 국조특위가 없으니 고발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2월 내란국조특위 당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의 12·3 내란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냐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논의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정식 안건으로서 제기가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지요.

한덕수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읽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 CCTV가 그 뒤에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얼척이 없었지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회는 한덕수를 국정조사에서 위증 행위로 고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조특위에서 계엄 관련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받자마자 비서관에게 줬다 하던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지요.

지난 4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청문회에서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당일 최상목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이 공개된 뒤 '고장이 났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계엄 이후인지는……'이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법안 개정된다면 한덕수와 최상목을 포함하여 국조특위에서 위증을 했던 인원들에 대한 위증죄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소급효가 위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관련 부칙조항을 삭제를 해서 이 부분은 법안 통과되고 나면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막고자 하는 법안이 이번 법안이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기간이 지나서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내란국조특위의 조사 결과를 살펴서 한덕수와 최상목, 내란 관련자들의 주요 증언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비상계엄을 하고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했습니다만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해서 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정말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창피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도둑이나 강도도 사전모의만 해도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것은 사전모의뿐만 아니라 국회, 신성한 국회를 침탈한 그런 비상계엄을 갖다가 사람이 안 다쳤다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란 동조당인 국힘에서는 국민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데 요즘 국민들 정치의식이나 수준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 점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란국조특위 결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경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날을 상기를 해야 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날의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국민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당시에 옛날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처럼 북한에서 무장공비들이 출몰한 줄 알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포고되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47분부터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고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 신분 확인자 출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23시 37분부터 전면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직원 등이 국회 경내 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사진이

있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자기 집이나 다름없는, 자기 사무실인 국회를 담 넘어서 들어오는 사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진짜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군 병력이 국회에 출동하여 23시 49분경부터 군 헬리콥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였고 육상으로 출동한 병력들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월담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무단진입하였으며 12월 4일 0시 44분경 특수전사령부 소속 일부 병력 등이 무장한 채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유리창을 파손한 후 본관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1시 1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헌법 제77조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87년 헌법에 따른 겁니다. 12월 4일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6일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였고 경찰은 12월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였으며 12월 11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 협의체인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내란국조특위에서 조사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 및 원인 규명 사항입니다. 먼저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여부입니다. 국방부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이지요—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원식 증인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의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진우 증인,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치고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비상대권 관련 얘기를 나누었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러한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곽종근 증인이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 전 특수전사령관이지요. 곽종근 증인은 당시 계엄이 될 상황이 아니고, 계엄이 될 상황이 아니고 될 수도 없었으며, 계엄이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특전사 대원은 따르지 않는다고 김용현 장관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진술합니다.

이진우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수방사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조사특별위원장은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윤석열·노상원·김용군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구치소 측은 윤석열·노상원·김용군 증인을 만나 현장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들은 모두 현장조사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를 국방부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 관련 준비를 했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11월 정보사령관,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진우 증인은 10월 29일 수호신TF단장,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 등과 여의도 변전소에 가서 여의도 변전소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변전소장은 여의도 지역에 단전이 되지만 우회 선로가 있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변전소를 점검한 이유는 국가중요시설 72개 중 부하들이 추천해서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국가중요시설 설계도면을, 그것도 국회만 꼭 찍어서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곽종근 증인은 수도권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1일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고 노조·야당·

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차관은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서 운영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현황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미 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21시 20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방첩사 복귀명령을 내리고 23시에는 체포조 구성을 하라는 지시도 직접 내렸다는 질문에 대하여 전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증인은 체포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본부 100명 그리고 경찰 100명 병력을 요청받아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을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사관들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으며, 수사관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정문에서 많이 떨어진 길에서 승차한 채로 대기 조치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대우 증인은 정치인 체포와 이송과 구금의 전 과정을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증인은 경찰이 체포하고 방첩사가 이송, 구금을 하는 체포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속인이지요, 일명 비단아씨인 이선진 증인은 2024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러 군인들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알려 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차례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사용되는 벙커에서 계엄 당일 아침부터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효 증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련 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상민 증인은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점심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청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 증인은 12월 3일 계엄 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국장인 박현수 증인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

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증인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말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삼청동 안가 등지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조태용 증인은 비상계엄 모의는 없었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격려의 자리였으며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이 이번 비상계엄 상태에서 핵심 통신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박종준 증인,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지요. 박종준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된 것은 맞으나 이는 국정연락 및 경호 기능이 있으므로 정부 출범 시 전체 정부위원에게 일시에 발급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 증인은 노상원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대통령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보안 목적상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하였으며, 노상원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이 와서 가져간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불출 현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증언했습니다.

비화폰 불출대장에 기록된 테스트(특)은 특전사령관, 테스트(수)는 수방사령관, 테스트(방)은 방첩사령관, 테스트(예)는 노상원을 의미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김대경 증인은 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하였고, 송땡땡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원은 그런 식의 명칭으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송땡땡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2024년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되었고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봉인되어 보관 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군이 쓰는 직책 비화폰과 별도로 사령관으로 보직된 이후 대통령경호처에서 받은 별도의 비화폰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안수 증인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 및 국가비상사태 행위의 원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입니다.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7~8회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했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원식 증인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성환 증인은—국가안보실 2차장이지요—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

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 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증인이 공유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오 증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에 대한 언급은 듣지 않았으며 경고 사격의 필요성에 대한 전화를 받았으나 기존 대응 기조와 매뉴얼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성환 증인은—국가안보실 2차장이지요—해당 요원은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2차장실 소속이 아니고 과거 HID 경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으로 이번 계엄과 무관하며 특정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 오땡땡 증인은 국가안보실 내의 비밀TF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기타 국조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명태균이 2024년 11월 15일 구속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의장 우원식 문금주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제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막 나가시네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이학영 부의장님실에서 경기 군포시 지역주민들 소개해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이고요. 여당에서 증언·감정법 법안을 제출했고 그 법안 제출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 반대의견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제기했습니다. 무제한토론을 하는 겁니다.

24시간을 계속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밤을 새워 가면서 하는 중이

고요. 그리고 의원들은 자기 조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많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하시고, 본회의장 이렇게 관람하시고 나가시는 데 편한 국회 관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문금주 의원님이 토론 중에 계십니다.

○문금주 의원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재미없는 내용일 겁니다.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0시경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을 먼저 소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21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1차로 모였던 국무위원은 도착한 순서대로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입니다.

21시경 대통령 집무실로 모이게 된 경위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12월 3일 20시 40분경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통지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12월 3일 20시 30분 전후로 도착해 계엄 선포에 관한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호 증인은 12월 3일 도착해서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께서 계엄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민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행안부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사무관 증인은, 손땡땡 증인은 12월 3일 당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집무실을 나오면서 점심 때 대통령이 찾을 수 있으니 울산에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용산 도착은 20시 40분 무렵이고 서울청사에는 23시 30분쯤 복귀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조태열 증인은 21시경 도착했을 때 5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해 있었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함께 들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조태용 증인은 사전에 이유를 듣지 못하였고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계엄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고 답변하였으며 계엄 선포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되거나 개최를 시도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증인에 의하면 12월 3일 당일 울산에서 이상민 증인과 같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상민 증인은 행사 도중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일정을 단축해 서울로 왔고 본인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다고 밝혔고요. 김포에 도착한 이후 21시 30분에 수행비서를 통해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았으나 국무회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었던 분들이 있었고 뒤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들어와 11명이 채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21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한 사항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호 증인은 계엄 선포는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조태열 증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A4 용지 한 장을 줬으나 국무총리께서 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A4 용지를 건넨 사실에 대해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조태용 증인은 12월 3일 21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 필요성을 역설할 때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대통령이 A4 용지를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민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배경과 관련해 한덕수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어서 본인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당시 여러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미령 증인은 21시 30분경 수행비서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요건 충족 여부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시간은 22시 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관련해 박성재 증인은 계엄 당일 회의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라고 증언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국무위원들은 동의하며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계엄사령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본인은 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대통령을 설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계엄 포고문 형식의 종이 한 장만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최상목 증인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으로 계엄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12·3 계엄 당일 회의에서 계엄의 종류, 계엄 지역, 시행 일시,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된 A4 한 페이지 분량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았냐는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비상계엄 정국, 일시, 계엄사령관 등을 담은 계엄 포고문 형식의 문서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송미령 증인, 김영호 증인, 조태열 증인은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증인의 경우 국무회의 후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

언했습니다.

12·3 계엄을 선포한 회의가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증인은 계엄 당일 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선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최상목 증인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통령실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은 자료에 안건, 발언 요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행정안전부로 보낸 회의록에는 해제 국무회의와 달리 의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관련 조사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 관련해 전 법무부 감찰관 류혁 증인은 언론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실국장 단톡방에서 비상소집이 있었고 법무부 청사에 12시쯤 들어갔을 때 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인지를 확인받은 후에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직의 뜻을 전하고 자리를 나온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했으며 류혁 증인은 그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태도가 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생각하거나 의구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류혁 증인과 같은, 전 법무부 감찰관이시지요. 사표를 내고 뛰쳐나간 류혁 증인과 같은 분이 한두 분만 더 있었어도 당시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울고 싶을 때 뺨 때려 준 격으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 정부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트럼프와 같은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하에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고맙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후 그동안 쭉 이렇게 보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중에서 한두 분만이라도 정말 죽기 살기로 막았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 국힘에서 장외 투쟁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자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 그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을 했으면 지금도 정권 잡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해 보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런 비상한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권을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계실 때 잘하지 그랬어요.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감 시설 준비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사령부의 요인에 대한 체포를 대비하여 교정본부가 수감 시설을 준비하는 등 내란 혐의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법무부나 교정본부가 구치소에 빈방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비상계엄 직후 교정기관장 영상회의를 개최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12월 4일 이상민 장관 등 4인의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관련하여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비상계엄의 주요 관여자들이 사후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해당 모임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주현 증인은 해당 안가를 보좌관을 통해서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계엄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모임에 참여한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대체 비상계엄이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정보만 공유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연락한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었습니다. 이상민 증인은 안가 회동을 위해 최초로 연락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냐는 질의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안가 회동이 있음이 밝혀지고 나서 참여자 4명은 모두 핸드폰을 교체하였는데 이는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가 회동 이후 용산에서 다시 모였냐는 질의에 대해 박성재 증인과 김주현 증인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김성훈 증인은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 내외의 사람이 안가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대경 증인은 안가의 시설물 관리는 본인이 담당하나 안가 사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완규 증인은 안가에 모이라는 연락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받았으나 대통령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당일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경위와 관련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조태열 증인은 당일 21시경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직접 문건을 주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대통령이 문건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한덕수 증인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상목 증인은 대통령이 본인을 불러서 참고하라고 하며 옆의 직원이 접힌 상태의 쪽지를 주었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었으며 기획재정부 1급 회의 종료 후에 이 부분만 보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한 후 무시하기로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지요—11시 30분경 F4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접힌 상태의 쪽지를 건네받고 밖에 나와서 내용을 잠깐 보았고 1급 회의가 끝난 1시 50분경 부총리가 앞부분을 조금 보더니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으니 무시하라고 하며 쪽지를 돌려주었으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부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 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떠한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비비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상목 증인과 김동일 증인—김동일 증인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해당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은 일시대출금 한도가 50조 원이나 계엄 자금 용도로 요청해 왔다면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계엄 당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윤인대 증인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긴급재정명령을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12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류중재 증인은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배정이 결정되어 12월 13일에 실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배정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배정 금액은 1급 비밀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 후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와 관련해 12·3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께 계엄 건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선호 증인,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심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심의 안건을 국방부에서 작성하였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바로 통고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회의가 끝날 때쯤 누군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부서해 두자고 얘기하였으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이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부서한 일이 절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이상민 장관 또는 김용현 장관이 부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송미령 증인은 계엄 당일 회의가 끝난 이후 문 입구에서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서명하고 가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국무위원은 아니나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월 5일 계엄 선포문을 출력하여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의 서명을 받고 7일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으나 8일에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전화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를 한덕수 증인이 인정하여 이에 관련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증인은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는지 묻기에 소지하고 있던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을 부속실장에게 보냈고 부속실장이 1장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이 문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며 사후에라도 서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서명한 부분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포고령 포고 경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해적과 연합해상작전 담당 김00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과 그 전날 '대통령실'이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걸 봤고 노란 봉투에 포고령이 담겨져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장관이 노란 봉투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문안의 내용을 계엄 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문안을 직접 받았고 포고령 문안을 보고 나서 법무 검토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대하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대답했다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진술했습니다. 이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시점이 24년 12월 3일 22시 23분이어서 포고령 문안의 발령 시간 22시가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23시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발령 시간만 23시로 수정한 후 포고령 문안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참고로 김선호 증인은 국방부 직원 중에 포고령 작성에 개입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김주현 증인은—대통령실 민정수석이지요—포고령, 포고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 증인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포고령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신원식 증인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점거 경위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내용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시 45분경 전 부대원 비상소집을 전파하고 12월 4일 1시경 소집이 완료되었고 선관위 과천 청사, 관악 청사,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꽃에 총 115명 부대원이 출동했습니다.

1처장 통제하에 12월 4일 0시 55분, 01시 43분간 4개 팀이 사복 착용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차 출발하였고 출동 인원 전원 임무지역에는 미진입하고 인근 휴게소·편의점 등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출동 경과입니다.

12월 4일 01시 3분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01시 6분경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의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를 전파하였고 01시 40분경부터 출동 인원의 복귀가 시작되어 02시 20분에서 03시 18분경 전원 사령부로 복귀했습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라는 방첩사령관 명령에 대하여 윤땡땡 증인, 당시 법무실장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 증인은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압수를 지시했지만 포렌식 장비를 지참하지 않았으며 부하들은 사전에 사령관의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성우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령 7명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했는데 정성우 증인은 수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사령부 관련 내용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 인원은 2개조 총 48명으로 계획처장 등 10명은 12월 3일 20시 30분에 사령부를 출발하여 선관위 과천청사에 22시 30분경 도착하여 서버실 위치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고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3일 20시에 소집하여 과천청사에 투입 준비를 하였습니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를 출입 통제하며 위원회 청사를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고 서버실에는 총 15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된 계획처장 등 10명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12월 4일 01시 32분경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철수하였고 투입 준비 중이었던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4일 05시 40분경 해산했습니다.

저녁 20시 30분경 선관위로 출발했던 부대가 실탄과 총기를 왜 휴대하였는지에 대해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총기 휴대 및 실탄 준비 지시를 받았고 출동할 당시에는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출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라는 구체적인 임무 하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봉규 증인은 11월 9일경 민간인 노상원을 만나 전달받

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봉규 증인은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확인한다', '케이블 타이', '야구방망이' 등의 언급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정성욱 증인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이 출근했을 때 해당 인원들을 회의실로 집합시키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보사령부 간부가 왜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를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증인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김봉규 증인은 문상호 사령관과 함께 있었고 이후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성욱 증인은 블랙요원 유출 관련으로 직무분리된 상태에서 10월 초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언급을 들었으며, 10월 중순경 특별한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원을 선발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아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는데 이후 문상호 사령관이 해당 인원 선발을 지시했고 그 이후로는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관위 출동 당시 작두를 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정성욱 증인은 민간인 노상원이 해당 물품을 구입하라고 말했고 문상호 사령관이 물품을 구매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증인이 구매하였으며 왜 작두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관련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관련 내용 좀 줄이고요. 필요한 부분만, 관심이 있을 만한 주요 정치인 체포 이행방안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대우 증인의 증언 및 국군방첩사령부 기관보고 자료에 의하면 계엄 당일 23시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 따라 대상자를 신속히 잡아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고 23시 4분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이 합류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할 것과 체육관에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는 호송차,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23시 30분경에 방첩사 수사단에서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하달하였고 23시 31분부터 23시 53분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현재 집결된 방첩사 수사단을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 및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출동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4일 0시 25분에 방첩사 수사단이 출동했으며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때 국회에 49명의 체포조가 10대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했습니다.

12월 4일 0시 30분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명령을 수사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김대우 수사단장은 12월 4일 0시 38분에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한편 김대우 증인은 ‘체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계엄 당시에 수사조정과의 단체대화방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달했습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

김대우 증인은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경찰 50명을 포함한 합동조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를 인정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다음 날 체포대상자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지시했지만 김대우 증인은 폐기 시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말고 조사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폐기하지 말도록 재차 지시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정말 실행이 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이라도 계셔 주니까 서 있을 만하네요.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 가지고……

○의장 우원식 뒤에도 있어요.

○문금주 의원 예, 맞습니다.

카메라만 있으면 흥이 덜 날 텐데……

재미있는 부분만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했는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곽종근 증인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구의 판단으로 철수를 하게 됐느냐는 질의에는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라는 상황을 인식했고 그 뒤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비화폰 통화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먼저 물어봐서 국회,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23시 47분에 헬기장에 랜딩을 처음 했고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아서 707특임단장이 출입문 위주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증인은 707특임단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그것은 특전사령관의 권한이 아니라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용 승인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통을 했는데 마치 그게 건의된 것으로 이해됐다면 그것은 본인의 표현이 잘못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지시를 내렸고 이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상현 증인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되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대

답했음을 증언했습니다.

박안수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했다고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 금지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전국 단위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특전사 등을 계엄군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박안수 증인은 승인받는 과정은 없었으며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했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불법 및 위헌적인 내용들이 증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과정에서 너무나도 뻔뻔한 위증, 거짓말로 점철이 됐으며 그게 나중에 고스란히 다 특검 조사를 통해서 또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특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특위 활동이 끝났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런 입법 불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 겁니다.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위헌적인 내용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어찌 됐든 없애고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수정안을 낸 것인데 그것도 수정한 것을 수정했다라고 또 뭐라고 하는 것 보면 참…… 그러면 어쩌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인 건데.

내란국조특위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관련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계엄 시 헌법 및 계엄법의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엄실무편람 등에 국회의 회의 방해 금지·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비롯한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지휘관의 준법적인 지휘·통솔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엄법 등의 관련 규정을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은 계엄 선포를 전후로 하여 헌법 제44조 및 계엄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체포·구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계엄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연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군의 개입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비상계엄에서도 정부와 국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을 반영한 법률 및 행정입법 등 개정을 검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군이 이용당했다는 국민적 실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엄 수행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심리치료 지원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작년 초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심지어는 계획하고 있던 김용현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최근에 국힘의 나경원 의원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이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을 방조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제 기억에도 국힘 의원들조차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손가락질해 가면서 비웃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고요. 그렇습니다.

둘째, 퇴역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필요성 관련 내용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모의 과정에서 정보사령부 간부 등에게 비상계엄 준비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공관 등의 장소에 수차례 특수부대 지휘관 등 간부를 만나는 등 군의 인사 및 행정 등에 관여하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셋째,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관련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등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은 자료에 안건 및 발언요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이후 관계기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요청을 전달하고 기록물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공수처의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후 폐기 금지 결정을 관보 게시 및 통보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비롯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증언과 지적사항, 향후 보완사항을 짚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내란국조특위의 증언과 불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인원들에 대해 한덕수·최상목을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증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조치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관봉권 띠지 관련 위증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종료된 특위의 고발권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기관을 기존의 검찰에서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넓히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이뤄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의 관봉권 띠지 관련 위증 의혹은 왜 수사 의뢰 기관을 넓혀야 하는지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현금 유통 경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인 현금 다발 및 이에 부착된 관봉권 띠지 및 스티커를 압수, 확보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입니다. 관봉권 5만 원권 100장 단위는 띠지로 묶고 이 묶음 10개를 다시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입니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전 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현금은 5만 원권 3300장, 1억 6500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이 돈의 출처를 확인할 핵심 단서인 관봉권 띠지를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사실이 지난 8월 19일 MBC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 단서를 분실했음에도, 어쩌면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일 수도 있음에도 검찰을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수사 진행 중에 감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입법 개혁청문회에 참석해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말하는 검찰 수사관들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위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청문회에 나온 남부지검 수사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이들이 사전에 작성한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 나 몰라', '지시 X'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하라 이거지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공무원이, 검찰 수사관이 국민을 대표해 청문을 하는 회의장에 나와서 이런 식의 언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사전에 지시는 없었다거나 관행상 폐기한다는 등의 답변을 검찰의 윗선과 조율한 것은 아닌지도 매우 의심됩니다.

또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 역시 청문회에 나와 정말 볼썽사납게 오만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최 검사는 관봉권 띠지를 누가 없앴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위원 질의에 '저는 없애지 않았다'며 이 자리가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압수계 수사관들을 데려 놓고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며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되레 걸고 넘어졌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위원회가 위증죄로 고발해도 어차피 현행법상 수사 의뢰는 검찰에만 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 조직에만 충성하면 나를, 자신을 지켜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증감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검찰 구성원들이 몸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개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최재현 검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여 주셔서 오히려 검찰 개혁의 명분 그리고 또 국회증감법 개정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 주고 갔어요.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보면 압수물을 검사에게 제출해서 검사에게 수리 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확인을 하고 원형 보존 필요 유무에 대해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원형 보존이 필요 없으면 그 내용을,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에 도착해서 건진법사가 원형이 틀림없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했고 그러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것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압수표에 이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검사가 이것 필요 없다 싶으면 그 내용도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지난 관봉권 띠지 관련 청문회에서도 관련 법사위원님들의 송곳 같은 질문으로 상당 부분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 검사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압수물 물품보관소에 CCTV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진짜 모르겠어요? 알면서 답변을 못 하는 거지요.

이처럼 검찰은 압수물에 관한 별도 사무규칙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중요 증거물을 훼손, 분실한 데 대해 검찰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증에 따른 수사기관의 다양화는 검찰의 자정능력 상실에 따른 수사권와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제가 자료를 최순실 청문회 위증과 반복되는 국회 불출석, 모욕, 위증한 내용들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반대토론을 했던 김은혜 의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가 관련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관련에도 시간 끌기 식 수사를 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앞두고 국정원 소속, 후보 지역 비하 발언 및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관련한 내용도 정말 국민들 분노하게 만든 그런 내용이었지요.

최근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오랜 세월 권력의 덮개 아래 가려져 왔었는데 최근에 그 뚜껑이 열리며 감춰진 진실이 폭풍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과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상대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별건 수사까지 동원해 기소 재판으로 몰아갔습니다만 주가조작 의혹부터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법 의혹의 집합체라고 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정말 봐주기 식 수사의 전형을 보여 주었지요.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쥐어 줬습니다.

또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있지요. 윤석열 당선 직후 22년 9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고가의 명품가방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수수를 했던 게 TV 화면을 통해 다 나타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당시 권익위는 또 이 부분을 합리화시켜 주는 지침을 내려보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었지요. 사건 종결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권익위 국장이 남긴 유서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고양된 윤리적 의무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

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검찰은 김건희 씨가 공범이 아닌 단순 방조 또는 투자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요. 건진법사,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및 각종 의혹 관련자를 장기간 참고인 조사만 벌이며 사실상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시작되자 한학자 총재 등 핵심 인사를 구속하고 관련 증거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검찰이 시간을 흘려보내며 사건을 묶어 둔 사이 진실은 점점 모래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이후에 권력자만은 예외라는 특권의식,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반복될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 뻔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증감법은 여러 문제에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특위 종료 즉시 고발 주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위증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도 고발할 위원회가 없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사위원장이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특위 종료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발 대상 기관이 검찰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었는데 검찰의 내부 우선순위, 정책 판단, 배당, 전결 구조에 사건의 속도와 방향이 종속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로 고발 대상을 넓혀 기관 간 견제와 경쟁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독점은 지연을 낳고 지연은 진실을 삼킵니다.

2개월 내 수사 종결 원칙은 종이에만 존재했습니다. 중간보고 의무, 연장 승인 절차 불이행 제재가 없으니 사실상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개월 원칙을 실체화합니다. 불가피한 연장은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며 보고 없이 넘길 경우 기관장 출석과 징계 요구, 결과보고 의무까지 명확히 하게 한 겁니다.

국회의 사후통제 수단이 약했습니다. 기관장 출석 요구와 징계 요구가 선언에 그치면 실효적 변화는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이행 시 조치까지 담아 국회의 감시 권능을 실질화한 것입니다.

다섯째, 증언·감정 제도의 실질이 약했습니다. 선서 위반과 허위 진술의 위험이 낮을수록 증언은 정치적 방패로 전락합니다. 위증 고발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발 대상을 다변화하며 기한 통제를 강제하면 청문회는 쇼가 아니라 사실 심리의 장이 됩니다.

여섯째,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냉소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를 통제하고 위증을 응징해야 합니다. 오늘의 개정안은 그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건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현실, 동일한 의혹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듯한 착시, 청문회장에서 국민 앞에 선 우리가 위증의 벽 앞에서 번번이 멈춰야 했던 좌절.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현 정부,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도 작동할 공정의 레일입니다. 누가 집권하든 진실은 같은 속도로 나온다는 상식의 복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는 길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위가 끝나도 고발할 수 있어야 하고 검찰만 바라보지 않아야 하며 2개월을 넘기면 보고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출석시켜 묻고 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징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위증은 끝이 납니다. 그래야만 국민은 국회를 다시 믿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방송을 지켜보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인 국정조사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1조제1항 다시 한번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국회는 국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증인 증언과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한 줄, 그러나 이 한 줄 안에 민주주의의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이 문장은 헌법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사해야 할 책무입니다.

국민은 개개인이 직접 권력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자의 방에 들어가 장부를 들춰 볼 수도 장관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회라는 대리인을 뽑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권력을 감시하라고 맡긴 겁니다. 따라서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지요. 국회는 이 권리를 위임받아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추궁해야 합니다. 감시·견제·비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국민은 반복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반복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늘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국민은 좌절했습니다.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이 권력자의 거짓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왜 국정조사권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바로 이 권력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위임하되 그 권력이 국민을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체제입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입구라면 감시와 통제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호흡입니다. 헌법 제61조가 바로 그 호흡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국민은 국회에 권한을 위임했고 국회는 그 권한으로 권력을 감시·견제·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무력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고 헌법의 약속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국정조사권은 늘 중요한 순간마다 소환됐습니다. 일전 수많은 사례들을 나열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국민은 번번이 배신당했습니다. 국회는 번번이 무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권력자의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의 허점, 증언·감정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도록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보장된 권한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의 다른 조항을 인용하겠습니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국민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알권리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은 청문회장을 보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권력자의 거짓뿐이었습니다. 국민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국회도 힘없는 기관이구나', '증인은 권력 앞에 무력하구나'. 이 좌절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정책은 불신을 받고 추진 비용이 늘어납니다. 기업은 정부정책을 믿지 못해 투자를 주저합니다. 시민은 정치와 제도를 믿지 못해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결국 사회는 갈라지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문회장과 국정감사장에서의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행정부가 문건을 숨기면 국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법부가 책임을 물으면 국회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은 국회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방패입니까, 권력자의 방패입니까?'. 이번 개정안은 이 질문에 답하는 답입니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방패로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우리 역사의 과거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를 떠올립니다. 그때 국회는 역사적 책임을 안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 총탄의 발포 명령, 군의 움직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권력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국민은 이번만큼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장의 풍경은 국민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당시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 권력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국민은 TV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탄에 쓰러진 가족들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권력자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국정조사권은 종잇장에 불과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 권력자의 거짓 앞에서 힘없이 꺾였습니다. 국민은 국회마저 권력자의 방패가 되는구나라는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에 직면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는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은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가? 누가 지시했고 누가 알고 있었는가?'. 그러나 청문회장에서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보고받지 않았다. 지시한 적 없다. 그런 일은 없었다'.

국민은 텔레비전 앞에서 다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권력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빠져나갔습니다. 국정조사권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청문회, 2016년 겨울 우리는 모두 광장을 기억합니다. 수백만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달라', 국민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은 다시 국회를 주목했습니다. 이

번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장면은 국민의 기대를 또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 권력자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그런 일은 없었다'. 국민은 그 순간 또다시 배신당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위는 무너졌고 국민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계엄입니다. 불과 얼마 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문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은 있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엄 문건이 존재했고 계엄 발동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것은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라 실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국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국회가 권력자들의 거짓을 그대로 받아 주고 국민이 눈으로 본 사실조차 부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역시 권력자들은 책임지지 않는구나. 거짓으로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구나'.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꿨던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과연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현실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목소리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광화문광장에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진실을 밝혀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왜 계속 믿어야 합니까?'. 지역구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아이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국회 청문회를 보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가게를 지키느라 허덕입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거짓말을 해도 책임을 안 지고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왜 늘 호구입니까?'. 한 퇴직 공무원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윗선은 모른다고 하고 실무자만 책임을 졌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또 어떤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 시간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권력자들은 다 거짓말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배우는 민주주의는 다 거짓말이 아닌가요?'. 이 목소리들이 쌓여 국민의 분노가 되고 절망이 되고 체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우리 사회 전체를 좀먹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거짓말이 반복되고 국회가 무력하게 그것을 지켜만 보는 현실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시작은 정치 불신의 심화입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거짓을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 전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설마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겠지요. 국회는 결국 아무것도 못 한다, 정치는 다 똑같다 이런 냉소가 퍼집니다. 그 결과 국민은 투표장에 가기를 주저하고 공적 논의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활력은 사라지고 극단적 진영 논리만 남게 됩니다. 국민의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걸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음으로 경제적 비용의 증가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곧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추가적인 설명, 홍보,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세금이 낭비됩니다. 기업 역시 정부 정책

의 일관성을 믿지 못하면 투자를 주저합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이 나라는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사회통합의 붕괴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믿지 못하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른 당 지지자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있을 거야. 내가 믿는 사실과 네가 믿는 사실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진실이 분열되고 국민은 서로를 불신합니다. 공동체의 끈은 끊어지고 사회갈등은 심화됩니다.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논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진영논리로 귀결됩니다. 그 속에서 민주주의는 점점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청소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아이들의 거울은 어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들은 무엇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청문회장에서 권력자가 거짓말해도 빠져나가는 모습,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 국민을 속이고도 웃으며 회피하는 모습,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정하다. 힘 있는 자는 법 위에 군림한다. 정의는 결국 약자의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가 과연 이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의회 청문회에서 위증이 확인이 되면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존 딘, 백악관 관계자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위증하다가 철저히 조사받고 처벌받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리처드 닉슨마저 의회의 힘 앞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회 앞에서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다는 원칙, 대기업 총수도 대통령 보좌관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위증을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로 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속이는 것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그만큼 형사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치의 역사를 경험한 독일은 권력이 거짓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증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합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헤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위증이 드러난 정치인은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법적 처벌과 함께 정치적 퇴출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기만한 자가 다시는 공직에 서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진국 어디에서도 국회 위증은 가볍다라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국회를 속이고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거짓은 반복되고 처벌은 지연되고 국민은 좌절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권력자들이 태연히 거짓을 말하는 모습은 이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채널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또 거짓말이잖아' '어차피 또 책임 안 지잖아'. 국민이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가장 큰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의회 위증을 중대 범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증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째서 정치 보복입니까?

거짓을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증거를 숨기고 국민의 대표기관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정의입니다.

정치 보복이란 정적을 겨냥해 억지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정적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겨냥하는 법입니다. 국회의 권능을, 국회의 권위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오직 거짓을 말한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스스로 우리는 거짓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주장은 수사기관이 과부하에 시달릴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국회가 고발을 해도 검찰은 몇 년이고 사건을 질질 끌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권력자는 웃으며 빠져나갔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 내자고 하는 겁니다. 고발 사건은 반드시 2개월 안에 종결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국회가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부하가 아니라 효율이고 정의이고 당연한 귀결입니다. 끝까지 지켜본다는 국회의 의지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주장은 국회 권한 남용입니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회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남용이 아니라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국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고발도 끝나고 검찰이 미루면 국회는 그저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무능이고 국민의 권리 포기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남용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방치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논리는 이미 제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는 여전히 청문회장에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배신당했습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입법의 본령입니다.

국민은 왜 국회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물음에 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짓이 용인되는 나라입니까? 권력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이 다 끝나는 나라입니까? 국민이 배신당하고 국회가 무력화되는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진실이 존중받는 나라, 책임이 명확한 나라, 국민이 당당하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나라여야 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듯 국회가 무력해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지난번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라고 비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곧 민주주의의 심장의 박동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국회가 권력의 앞잡이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가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광장에서 만난 청년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회가 진실을 밝혀 줄 줄 알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계속 믿어야 합니까?'. 지역구에서 만난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이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보면 차마 그런 말은 못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 민주주의국가로 불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은 제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의회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못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위증이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규정됩니다. 독일에서는 위증자가 엄정한 처벌을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위증 정치인이 정계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에 국회가 멈춥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를 선진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청문회장에서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습, 국민을 속이고도 웃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뭘 배우고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살아 있다. 권력도 진실 앞에서는 무릎 꿇는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다' 이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약속입니다.

사회계약론의 아버지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회가 무력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과 국회가 다시 맺는 사회계약을 맺으려 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거짓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헌법적 권한을 절대로 행사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시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앞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로 지켜 온 역사입니다. 촛불로, 투표로, 광장의 함성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 왔습니다. 이제는 제도로 지켜야 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바로 그 제도적 장치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꽃피우고 무너진 국

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며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에게 정의로운 나라라는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폐지되었다가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다시 부활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함께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반세기 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한민국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독재에 의해 잠시 멈춰 서기도 했지만 우리 국민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재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선배 국회의원들도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배님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힘겨운 투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을 바로 세워 더 이상 국회에서 위증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이고 국민께 대한민국을 되돌려 드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문금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성훈)

(12시36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박성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기획재정위 소속 부산 북구을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2025년 9월 29일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폭력의 현장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민의의 전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없었습니다. 힘의 지배, 다수에 의한 소수의 겁박 그리고 가짜뉴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강경한 행보들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국회의사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다수의 폭정에 맞서 분연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비록 비루하고 지루한 투쟁이 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 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많은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민주당의 폭주는 바로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반헌법적인 시도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사법부를 힘으로 겁박하려고 하는 시도가 국민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힘에 의한 논리로써 국민들의 상식적인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비록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야 하는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장외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민생도 챙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 여당이 먼저 양보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여당이 양보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가진 게 많은 여당이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본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글을 쓴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2개의 기둥이 있다. 그 기둥은 바로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다’.

국민 여러분,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22대 국회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민주당에 강하게 요청합니다. 이제 그 오만한 폭주를 멈추고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미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감법에 대한 개정안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증감법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 처벌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특정인을 위한 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명 처분적 법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은 그 법 제정의 순수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법은 한덕수 전 총리를 표적으로 하는 한덕수 표적처벌법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특정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법률적 흠결 외에도 우리 법의 근본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소급입법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법률적 사실이 완성된 과거의 사실을 처벌하겠다는 진정소급효를 가진 법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특정인을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권력이 없고 힘이 없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민주당이 특검에 하명수사를 사실상 지시한

부분입니다. 내란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또다시 내란몰이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란몰이 시도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법을 상징하는 그 상징에는 눈을 감고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부귀 또는 권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그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칙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시스템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고가 바로 며칠 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입니다. 국가전산망의 먹통이 단 한 번의 화재로 발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결국 민생은 도외시한 채 권력의 강화와 본인의 재판에 대한 면책성, 면피성 시도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번 화재는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입니다. 배터리 하나 때문에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사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IT 강국 대한민국, 디지털 강국이라고 이름 높였던 대한민국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진정성이 담긴 책임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항상 그래 왔듯 지난 정부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유체이탈 화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 같다라고 관계부처를 질책했지만 정작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재판정에서는 늘 내 잘못은 없다라고 외쳤던 피고인의 이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것은 남 탓이 아니라 국민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대통령의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행안부장관을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집권한 뒤에는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전 대책, 안전 점검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민생이 얼마나 말뿐이었는지 총체적 무능에 빠진 이재명 정부의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야당 시절에는 갖가지 이유로 정권의,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정작 집권 후에 몰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 보복,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갖가지 야당 탄압이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결국 민생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국가 재난 앞에 한가롭게 책임 전가만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사과는 말이 아니라 뼈를 깎는 대책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완전복구에 최소 2주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민원 대란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능한 남 탓이 아니라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신속한 실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체이탈식 화법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 피해 복구를 최대한 단축시켜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국가적 행정 마비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편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평가도도 상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교를 하고 나면 항상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예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결국 방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관세협상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최고 책임자로서의 행동에 대한, 외교 행보에 대한 국민적 반감, 반발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번 방미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불 대미 투자는 선불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놓은 반응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저는 이 발언에 반신반의했지만 국가적·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3500억 불 대미 투자 펀드의 규모와 그 제안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 불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그 금액은 돌아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3500억 불은 대부분이 대출 또는 보증으로 구성이 될 거다'. 결국 론(loan)과 개런티라는 단어를 써 가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에쿼티(Equity)라고 불리는 직접투자는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도 부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드러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측은 3500억 불을 모두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프런트(up front)라는 단어를 써서 선불이라는 뜻을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4100억 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 맞먹는 3500억 불을 선불로 현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은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을 보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그런 협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 이보다 잘된 협상이 있을 수 없다, 외교천재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3500억 불을 우리가 미국에 지불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시도를 반미 감정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명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제 와서 반미 감정으로 한미 관세협상의 실패를 넘으려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대미 협상은 미래를 보고 걸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우리가 반드시 국익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에 국민과 괴리된 채 그들만을

위한 정보로, 스스로의 자화자찬으로 국민적 신뢰를 이재명 정부는 잃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연 이러한 외교 참사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불을 현금으로 선불로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실용외교의 정체는 결국 무능과 안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 방문으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민낯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이게 진정 이재명식 실용외교입니까?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 뜻은 한미 간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는 대통령실과 역대급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던 민주당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그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국내의 산업계입니다. 국내 산업계는 각종 악재와 불확실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미 간의 상호관세율, 도대체 언제 15%로 낮춰지는 것입니까? 지금도 한국 자동차 업계는 25%라고 하는 고율의 관세를 아직도 물고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45개국 정상들이 모여든 만찬에서도 별도 일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교 행보입니다.

전 세계의 정상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이 맞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냉철한 인식도, 세밀한 전략도 없는 대통령실로 인해 국격은 더할 나위 없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 한 채 코너에 몰리고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직시하십시오.

아직도 비현실적인 기우제식 평화론을 외치면서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려는 대통령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부장관, 외교 무능이 드러나자 반미 선동에 나선 총리까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에 국민적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전략 없이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외교, 굴종적 태도로는 그 어떤 성과도 거두어 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실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냉정하고 현실적인 외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던지는 최후 통첩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사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판의 합의 과정, 법관의 심증 형성을 국회가 캐묻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분명히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견제가 아니라 권력의 몽둥이고 사법부를 내려치는 조폭식 협박에 불과합니다. 권력에 굴복하라는 입법 독재의 폭거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으로 끌어내려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분풀이성 청문회입니다.

결국 이미 허공으로 사라진 대선 개입 의혹의 망령과 출처조차 불분명한 4인 회동설과 같은 저열한 지라시 수준의 의혹을 가지고 헌법기관을 굴복하고 정치적으로 마녀사냥하겠다고 나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법부 뒤에 숨지 말라, 사법부를 향해서 숨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뒤에 숨어 독재적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법관이 아닙니다.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 법치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검찰청 폐지, 인민재판부 설치 같은 위헌적 입법 만행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진짜 주범입니다.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이라는 이름의 족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이제는 대법관 증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사법 인질극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입법 독재의 칼춤을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만행,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폭주를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은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는 결국 국민 여러분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법부를 여러분의 손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사법부의 독립성 결국 우리 국민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사법부 파괴 시도를 반드시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곳 국회는 가짜뉴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짜뉴스로 인격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모르는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 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로 인격살인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출처 불명의 조작 파일을 근거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수장을 비난하면서 진실이 드러나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유튜버에게 물어보라며 발뺌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후안무치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처참한 사례이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많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기조차 부끄러운 참담한 처사입니다.

조작 파일을 국민들에게 틀어 댄 서영교 의원은 과거 논문 표절, 딸 인턴 특혜 등 특

권 백화점 6종 세트라는 오명을 쓴 인물입니다.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제는 무고한 사람의 명예와 법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지난 2020년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을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당시 개정안에는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가짜뉴스 유포 시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이 스스로 가짜뉴스의 처벌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서영교 의원의 조작 파일 사건을 서영교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청담동 술자리 괴담, 흑석선생 사례처럼 근거 없는 의혹을 키우다 거짓으로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행태가 이제는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고질적 문화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묵인한 결과 민주당은 이른바 민생을 위한 그런 소식이 아니라 가짜뉴스와 괴담에 몰두하는 정치적 괴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궤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열린공감TV에서 나온 것, 그쪽에 물어보라면서 책임을 떠넘겼고 정청래 대표는 한술 더 떠 억울하면 수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말처럼 떳떳하면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까지 궁지로 모는 것은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파렴치한 정치 공작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을 망쳐 놨다며 가짜뉴스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은 왜 민주당발 가짜뉴스에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들 인생을 망친 가짜뉴스는 엄벌해야 하고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뒤흔들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가짜뉴스는 괜찮다는 것입니까?

○부의장 이학영 공고 좀 하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예.

○부의장 이학영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강명구 의원실 소개로 경북 구미원당초등학교 학생 109명이 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멀리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라고 국회에서 어떤 의안에 반대 의견이 있을 때 무제한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박성훈 의원께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신데 의원님들은 오며 가며 자기 일 하시다가 또 왔다 가시고 하는 중입니다. 본회의가 아니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이렇게 방청을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잘 보시고 좋은 체험학습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박성훈 의원 예.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치를 짓밟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외부에 묻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것만이 가짜뉴스 괴물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겁한 책임회피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치의 파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헌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태이자 오만함의 폭주입니다. 그리고 선출 권력 독재의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의 법치 파괴 행보는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이인삼각 경기라도 하듯이 한 몸으로 사법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헌법이 지켜 온 삼권분립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와 법원, 변협의 추천위를 꾸려 특정 사건을 맡을 인민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자 추천 권한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본질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는 곧 정치가 재판부를 지명하는 정치 법원, 민주당 전용 법원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세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부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내란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에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라고 선동을 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는 결국 입법부가 판결문까지 쓰겠다는 폭거입니다. 말 그대로 입법쿠데타입니다. 사법 독립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이 발언을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진의는 동일했습니다.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반헌법적 처사입니다. 국회가 사법부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그 책무를 저버리고 재판 길들이기에 나서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는 민주당이 추천한 검찰이, 민주당발 검찰이, 민주당이 뽑은 민주당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란재판부 집착과 검찰청 폐지 밀어붙이기는 결국 이재명 권력 사수, 이재명 방탄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권력자 비리 수사는 가위질당하고 범죄 대응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범죄는 결국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관 증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대법관을 보조할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결

국 1심과 2심을 담당하는 사실심 담당 법관들로부터 충원되어야 합니다. 1심과 2심은 결국 사실심으로서 사실 확정에 필요한 구체적 재판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판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실심의 형해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법 개혁입니까?

결국 내란재판부, 인민재판부 설치와 검찰 개악은 법치의 파괴와 동일어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결국 독재만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일방 폭주를 목격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켜 온 민주주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는 더 이상 그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다수당의 폭주, 일당 독재, 그 생생한 전달의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생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민생을 지키는 힘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서 나옵니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그 진정한 고결함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민의를 가진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는 결국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 관세협상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한미 관세협상 당시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질 거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 한미는 FTA 체결국입니다. 저 역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서 한미 FTA 협상에 직접 실무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얻어 낸 성과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적 반발을 극복하고도 이루어 낸 국가적 국익을 극대화한 그런 협상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던 관세율이었습니다. 0%입니다. 그 관세율이 이제 25%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일본이 이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25%p라는 상호관세율을 새롭게 부과받은 반면에 일본은 그 절반인 12.5%의 관세율만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적용된 이 폭을 계산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특히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산업계에 대해서 어떠한 속시원한 대책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산업계는 정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면 내가 탄핵당할지 모른다.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자, 이게 우리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을 그 어떤 협상보다도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입에서 나올 발언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숨겨 온 것은 무엇이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는 무엇인지. 단순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해 온 대국민 사기극을 뒤덮기 위해 반미 감정에만 의존하려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는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기재위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3500억 불이 대출 보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쇠사슬 굴욕 외교의 현장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결국 자화자찬 회담이 남긴 것은 외교적 굴욕과 우리 국민, 기업의 고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보다 국익이 중요하다는 말로 덮으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은 뒷전, 이미지 메이킹 쇼에만 몰두했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깨닫고 계십니다.

저는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은 외면한 채 사법리스크 방탄에만 몰두하고 친중·친북 외교로 동맹의 불신만 키워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외교적 고립은 명백히 자업자득의 측면이 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불편한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즉시 협상전략을 재정비하십시오.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러한 측면에서 냉정한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무능한 정부의 외교 실패 대가는 아무런 잘못 없는 국민이 치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의 공세에 법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이익의 극대화, 행정효율성의 극대화라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대원칙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처리된 오로지 민주당의 선거 전략용, 정권 연장용 술수에 불과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새 정부가 5년을 준비하려는 설계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 내용이 아니라 처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법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독으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정부조직의 밑바탕을 그리는 이러한 작업은 결국 야당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로 여야는 특검법,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합의가 깨졌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 정치,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정치의 폐해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여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직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대변자로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위치에서 발언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고려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 일부만을 위한 정치를 이어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협치에 대해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었어야만 합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국정을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 제8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둘러싸고도 여권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졸속으로 이 법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와 에너지정책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바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입니다. 결국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전격 철회함으로써 재정경제부는 세제와 거시경제만을 담당하는 부처로 전락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당초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 내고 그 대신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오기로 한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법안 철회가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서라고 여당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 개편안도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을 배제할 이유는 없었겠지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지루하고 끝없는 투쟁의 결과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이제 국회도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 그리고 보편성에 그 뜻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 가서 여야 대표의 회동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했던 몇 가지 말들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 민주당은 가진 게 많으니 여당이 양보하는 게 좋겠다, 또 여당이 협치에 나서 달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영수회담 이후에도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그리고 국회에서의 일방 독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야당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입니까?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언제 작동하는 것입니까?

이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서 더 복잡한 후속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개혁 작업은 결코 성공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당이 5년 내내 독주로 일관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재위 소속이기도 하지만 운영위 소속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국회운영위에서 민주화 이후 국회 증인의 관례를 깨는, 총무비서관 국회 국정감사 출석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참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비서관, 비서실장보다 하위 직위에 있는 총무비서관이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총무비서관이 비서실장보다 더 위에 있거나 아니면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의 인사와 재정 이외에 다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존엄이냐?'라는 그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다 나왔습니다. 결국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보직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음지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국익 차원에서 봐도 좋은 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김현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민운동 시절부터 동행한 최측근입니다. 이번 내각 인선과 대통령실 조직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잇따른 부실 검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인사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 국정감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여당은 증거도 없는 대법원장, 총리의 회동설을 근거로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냐며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되묻겠습니다. 기세등등한 여당이 왜 김현지 비서관 앞에서는 쪼그라드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저희가 역대 정부 총무비서관 대다수가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는, 반드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번 정부의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소상하게 국민 앞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앉아 있는 자리 옆자리가 나경원 의원님 자리입니다. 법사위 간사로 저희가 추천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9월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진짜 일회성 소동으로 넘어가기 힘든 심각한 함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태가 그대로 용인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수당의 그런 행태를 통해서 야당 소속 간사 및 상임위원장을 다수당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언제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당의 이중대 야당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관행과 관례는 자당이 추천한 간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우리 동네 이장을 뽑는데 왜 옆 동네 이장이, 옆 동네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습니다. 결국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다수의 수의 우위에 의한 폭거가 반복된 것입니다. 각 당 간사는 각 당 의원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추인하던 그런 오랜 국회의 관행을 스스로 깨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의원을 간사로 추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태야말로 야당을 여당의 이중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당 간사가 없는 상태로 이번 행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라고 규정한 국회법 제50조 1항 위반이기도 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국회법 제50조 2항 조항의 위반 소지도 큽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민주당의 일당 독주, 일방 독재입니다. 야당 내부의 호선에까지 간섭하는 지경에 이제는 이른 것입니다. 아마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하면서 결격사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말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이러한 사법개혁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인민재판부 도입, 내란특판 도입에 대해서는 사법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회의 직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선출 권력 우위론을 설파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고 사법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헌정사상 여러 차례 사법개혁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장들이 법원장회의까지 열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들고 나온 것은 바로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파기환송한 직후였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체제를 바꾸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를 들고 나오더니 대법원을 논의에서 배제시킨 채 몇 달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내란특판을 설치하는 법안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갑자기 추진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사법부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달합니다.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법관평가위원회를 우리 쪽, 민주당 쪽 사람들로 채우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얼마든지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법부의 독립 훼손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결국 여론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재판 독립의 침해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대통령은 중심을 잡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판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의미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들을 모아서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법치 국가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과거 민주주의에 접근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독재로 회귀했던 그 시작은 사법부의 독립 훼손이고 사법부의 장악이었습니다.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영구 집권을 위한 사법부의 파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에는 그 반대인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의 정리정략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이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을 정략적 계산으로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 파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야당과 협상할 때는 당대표는 물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을 과거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있으면서 이러한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다음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마치 여야 합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합의는 당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과 내란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본인 생각이라며 여야 합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 내용을 승인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뒤집으며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냐는 항변으로 들렸습니다.

원내대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결국 여야 합의와 파기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 강경파와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 강성 당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내란당과의 야합이라며 여당 원내대표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정 대표가 물러났고 이재명 대통령도 개딸들과 같은 뜻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입니다. 결국 강경파 뜻대로 된 것이지요.

제가 이 부분을 민주당의 당내 사정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정치는 국민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진영, 특정 계파,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펼치는 정치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진영을 위한 정치이고 편파성을 띤 정치이며 국익과는 상반되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협치를 외치고 신중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대표 뜻대로 사안이 정리되는 모양새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폐지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야당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한 다음 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의심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입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모두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동향을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했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 도입에 대해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며 두 사안 모두 민주당 강경파와는 결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해서 합리적으로 소신을 관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경파와 개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주재 대사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합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극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유엔대사에 내정됐습니다. 외교 관련 경력은 전무합니다. 민변 활동을 했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습니다.

차지훈 유엔 주재 대사는 지난 2020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입니다. 무척 고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우리 국익을 가장 첨예하게 지켜야 할 외교의 현장인 유엔에 그것도 대사로 임명한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나왔습니다.

유엔대사는 4강 대사와 함께 장관급 예우를 받는 핵심 외교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해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으로 국제외교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서 북핵 등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도 다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말까지 유엔안보리 이사국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안보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핵심 기구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어떤 분들이 유엔 주재 대사에 임명됐는지만 보더라도 이 자리가 가지는 외교적 중요성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외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외교관이 주로 유엔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도 유엔대사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독 사법연수원 동기를 많이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지훈 유엔대사를 비롯해 연수원 동기만 무려 7명째 고위공직자로 지명했습니다. 상당수는 경력과 전문성 없이 발탁됐습니다. 연수원 동기라 하더라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면 저희가 문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동기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외에는 그 자리에 앉게 된 뚜렷한 이유도, 전문성도, 경력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

원 동기는 약 300명일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정부 동안 소위 수십 명, 더 나아가 300명 모두가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게 아닙니까?

미국 등 해외에서는 스포일 시스템상 대통령이 친구, 지인을 요직에 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발탁을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되묻겠습니다. 이제는 황당함을 넘어서 참담합니다. 제발 민주당은 여기서 그만 그쳤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만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특히 예산실과 재정운용실에 근무하던 당시에는 누구도 깨지 못하는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정규율입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금과옥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재정 중독을 넘어서 재정 포퓰리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재정건전성으로 지탱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펴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합니다.

제가 해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가 내각이 또 붕괴가 됐습니다. 프랑스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114%에 달하고 올해 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5.4%에 이를 전망입니다. 당시 바이루 총리가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4.6%로 낮추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재정 포퓰리즘이 누적돼 국가부채가 유럽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 IMF 구제금융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의 복수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3.4%로 이탈리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2일 피치도 현재 AA-인 국가신용등급을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2029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58%에 이를 전망입니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악성 적자성 채무가 4년간 약 440조 원가량 급증하게 됩니다. 연금, 복지 등 의무지출 가운데 국채이자 지출이 9.1%로 가장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준수하며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한국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사이에 이른바 악어의 입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건전성은 결국 지금 현재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건전하게 쓰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끝은 명약관화합니다.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인해서 국민 삶이 붕괴되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늘어나는 재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 여러분의 민생에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도록 국정 운영 방향성을 다시 바로잡는 일입니다.

국가채무는 내년도에 1415조 원 수준입니다. 2029년에는 1789조 원으로 연평균 약 122조 원씩 증가될 전망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73.9조 원에서 내년 109조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국가채무비율 48.1%에서 51.6%로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이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의 구조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증가율로만 따져 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국가이며 그 속도 역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고령화가 이루어진 서구 선진국들과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미래 대비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여력을 가져가야 할 대한민국이 서구 선진국들, 이미 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외환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재정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던지는 경고이자 충격파입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갚아야 하는 내년도 국채이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만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2029년에는 44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OECD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채무 증가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용등급 압박 요인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표 확장재정은 5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도 급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을 우려합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기업 부담의 증가는 결국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포퓰리즘 정책으로 펑펑 쓰는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등골을 휘게 하는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 신호탄은 현금성 그리고 일회성 현금 살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살포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특단의 조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포퓰리즘 현금 살포는 위기 연장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정책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다양한 실증연구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심각하게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코로나 당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통해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4.8% 폭증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가 수

치로써 확인된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포퓰리즘 정치가 고착화될 경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는 체감도입니다. 정책의 효과성보다는 인기에 치중하는 일회성·선심성 정치문화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IMF를 비롯한 많은 해외 금융기관들, 신평사들이 한국의 구조개혁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개혁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채 선심성 재정 정책, 포퓰리즘 정책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파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을 변환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국정 운영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5년간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는 하락할 것이 뻔합니다. 벌써부터 국제신평사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던 외자는 다시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경제위기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될 그런 위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를 했습니다. 장외집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 나온 구호는 민주당의 사법 파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반복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의 철학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한 국제행사에 참석해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사법연수원 당시에 저의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올곧은 모습을 보여 주셨던 분입니다.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구성,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여론몰이 공작을 벌이며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처럼 세종대왕은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 백성을 지키는 방패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권력 서열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사고를 이재명 대통령은 내비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사법부 수장을 쫓아내려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닌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자신의 무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자리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을 부디 새겨듣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

의와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될수록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눈물겨운 짝사랑,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조롱과 굴욕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9·19 공동선언 7주년 메시지는 여전히 한반도의 엄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평화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이러한 굴종적 대북 외교 그 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외치고 있을 때 북한은 김정은이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닮은 무인기의 성능시험을 참관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구애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위협적 신호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던 그 순간에도 북한 측 인사들은 회의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7년간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수시로 도발을 감행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은 핵미사일을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와 무력도발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강경한 북한 앞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대북 대비태세만 악화되며 안보 불안을 야기한 과거의 실책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굴욕적인 전력을 무시하고 군사합의 복원만을 외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김여정의 허황한, 허망한 개꿈, 망상, 조롱까지 받은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단꿈에 취해 있다면 국민은 굴욕과 불안을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굴욕적인 대북 저자세,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안보 태세와 단호한 대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이 한국의 외교 현주소를 여실히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 당시 자리를 지킨 국가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연설 내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이슈를 말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치열한 계산이 엿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장밋빛 환상만이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을 향해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정은이 불과 며칠 전 한국을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고 유엔 연설을 앞두고는 2개의

국가임을 천명하며 단절을 강조했지만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구애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선의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일방적인 유화책을 쓰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북한의 핵 고도화의 시간만을 벌어 줄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덮어 둔 채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린다며 외교 무대에서까지 국내 정치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에 이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협상, 지지부진한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인 전략 없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이 담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만 실용외교를 외치지 말고 한반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둘러보고 외교 안보 리스크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3500억 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발표한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농담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농담으로 치부한 것은 외교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경솔한 언행입니다.

외교 사안에 탄핵을 언급한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나라와 경제와 국익이 달린 외교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소상히 드러난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사면초가 신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동맹국에게 구금 사태라는 뒤통수를 얻어맞고 신뢰는커녕 양국 간 불신만 쌓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책임 회피에 따른 관세협상 실패를 미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둔갑시켜 반미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언제나 앞뒤가 다른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협상마저 잘됐다고 하니 진짜 잘된 줄 알더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센 척하지만 뒤에서는 왕따 신세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대한민국 앞에는 25%의 관세보다 더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보복과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부감사 벌이는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내던지고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습니다. 인력 대부분이 배치된 진상규명팀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의혹, DMZ 내 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이 있었다고 결론이 난 사안들을 다시 겨누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왜 이런 감사를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충성경쟁 곧 청부감사일 뿐입니다. 문재인 시즌2 식 적폐몰이로 독립기관이어야 할 감사원이 권력 코드 맞추기에 나선 순간 감사원은 그 독립성을 잃고 헌법적 가치는 무너지고 정치보복의 칼춤만 남게 됩니다.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민주당이 낙인찍은 표적감사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정권 맞춤형 청부감사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공직사회가 공포통치의 도가니로 내몰리는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보복의 도구로 남는다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이 길의 끝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와 감사원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올린 것은 민생도 안보도 아닌 4년 연임제 개헌이었습니다. 결국 오로지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그 뜻만, 그에 대한 집착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드러난 것은 영구집권과 권력장악의 집착이었습니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은 국가 미래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영구집권을 위한 정치공작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국민이 목도하는 현실은 민생이 아니라 권력놀음입니다.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당 해산 공세, 입법폭주와 사법장악 퍼즐의 마지막 퍼즐은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국정과제 발표는 그 완결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선 안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의 고해성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입법을 무기로 사법을 짓밟고 권력을 전리품처럼 쥐락펴락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기 고백에 국민들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 나눠 먹기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화려한 구호 뒤에 숨은 것은 빚 중독 국정 운영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마당에 이미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빚더미 위에서 영구집권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한 개인의 야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국민의 것이라 부르면서 자기 잇속을 위해 활용하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은 결코 완성될 수 없으며 그 폭주는 결국 국민이 막아설 것입니다.

친중 하면 애국, 반중 하면 깽판 이게 세세정부의 기준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지만 중국인들의 낮은 구매력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국민적 반감, 이미지 하락 등의 이유로 다른 국가 관광객이나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되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이미 무비자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문제는 물론 온갖 민폐 행태가 SNS와 언론보도로 전파되기까지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피의자 2917명 중 1941명, 약 66%가 중국인이었고 2024년 잠정 집계에서도 전체 외국인 피의자 608명 중 412명, 약 67%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치안 악화와 국민 피해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여행사의 책임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실험이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라는 사실이 의심스럽다는 국민 여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명동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중 시위를 두고 '깽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경찰은 반중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중국의 눈치가 두려워 억압한다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반중 시위가 깽판이라고 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사드 배치 당시 민주당과 민노총, 좌파 시민단체가 반미·반일 시위를 벌이며 선동한 것은 깽판이 아니었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를 비롯해 대진연, 민노총, 전농, 진보당 등이 벌이고 있는 반미 시위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니 친중 하면 애국, 반중 하면 깽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만 보면 작아지는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만 바라보는, 중국 눈치를 보는 저자세 외교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인을 위한 처분적 법률에 관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내세우며 경제계를 억압해 온 독재정권의 유산, 재계의 오랜 숙원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배임죄는 군사독재의 산물이 아니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건국 직후부터 있었던 죄를 뜬금없이 독재의 유산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쇠고랑 찰 것 같으니 쇠고랑 자체를 없애자는 억지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진짜로 노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배임죄로부터 구해 내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기소되고 본인은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반기업 정

서로 먹고사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경제계의 요청이라며 배임죄를 없애겠다니 이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권력형 비리를 제도적으로 눈감아 주자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아예 죄를 없애자는 이 시도는 명백한 위선이자 법치 파괴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대통령이라도 그 부인이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조희대 표적 사정법은 민주당의 광기 어린 입법 쿠데타입니다.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 지도부도 패싱당한 개딸 눈치 보기, 지방선거 출마용 정치쇼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의 논리입니까?

민주당의 광기 어린 폭주를 종용하는 개딸들 외에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런 권력을 민주당에 위임했습니까? 정권 보위를 위해 헌법까지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딸 하명 청문회, 표적 사정법, 입법 쿠데타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반미 감정까지 이용하려는 이재명식 거짓 성과와 국민 기만 외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중국의 굴기와 북·중·러 밀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겹치며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방향을 잃은 채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거짓 성과와 국민 기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던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이견 때문에 멈춰 섰고 성공이라 포장했던 협상은 이제 와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로 뒤바뀌었습니다. 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하는 외교 천재가 아니라 거짓말 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습

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화와 협력의 기반은 한반도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보다 못한 현실 감각을 국제무대에 드러냄으로써 그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종외교, 대북 굴종외교와 함께 굴종적 대중 외교도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 그리고 반중 시위를 깽판이라 부르며 중국 눈치만 보는 세세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아울러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국내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허황된 말장난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 내는 실질적 외교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대중 외교를 규탄하며 국익 중심의 당당한 외교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역대급 외교 참사를 성공으로 둔갑시킨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국민 기만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한국의 최근 5년 치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국책은행, 정부, 공공기관이 전 세계에 5년 동안 쏟아부은 해외 투자를 이재명 정부가 한꺼번에 미국에 내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3500억 달러는 1990년 이후 35년간 순해외직접투자 누계 3624억 달러와 맞먹고 역대 대미 직접투자 모두를 합친 2563억 달러보다는 1000억 달러 이상이 많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금액을 내주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걱정하며 '가만히 있으니 진짜 가만히 있었던 줄 알더라. 이빨까지 흔들렸다'는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협상가, 외교 천재라며 치켜세웠고 대통령실은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관세는 여전히 25%이고 투자 조건은 불투명합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성공한 협상이라 생색을 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 합의했으면 탄핵감이라고 고백하는 모순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 협상 뒤에 국민이 마주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참담한 사태였습니다. 그사이 미국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300명의 추방을 막으려면 매년 400억 원 안팎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H-1 비자의 문턱을 높이는 것도 이재명 정부는 막지 못했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고 발을

빼지만 과연 이 막대한 금액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진실은 감추면서 허상만 포장하고 국익은 뒷전인 채 공만 챙기려는 생색내기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적 비난이 두려워 굴욕적 협상을 외교 성과라고 포장하며 덮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협상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냉정한 평가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관세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의했는지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를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근거 없는 성공론으로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과하십시오. 국익을 지키지 못한 무능도, 국민을 속인 책임도 결코 덮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울려 퍼진 15만 국민의 함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헌법의 가치를 짓밟는 불의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분출될 것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춰 선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반드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자신의 일체를 가리기 위해 사법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재판 재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불의한 정권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역사는 이미 증명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을 위한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법, 민노총 하청법만 통과시켜 왔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이는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아울러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 뒤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권력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뻔뻔한 책동입니다.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로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도록 만들고 이재명 무죄법으로 법치주의를 유린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 법 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만행은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설계는 괴물독재국가의 서막입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 주려는 판결구조 재편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방조 구속영장 기각 등 이 정권이 벼르고 있는 판결이 잇따른 직후 튀어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보복성 입법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 증원이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으며 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 몫을 보태 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원을 재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이며 이는 재판 독립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폭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안에 따르면 김어준, 친여 시민단체 인사 등 정권 입맛에 따라 대법원 인사가 좌지우지될 거라는 세간의 우려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법 근간을 흔드는 재판 독립의 침해,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조차 진짜 개혁은 일심 심리에 충실하는 것, 증원은 오히려 사건 지연과 로펌 배 불리기뿐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법조계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겠습니까.

더욱이 정청래 대표가 이 사안을 여전히 숙의와 공론이 아닌 밀실 추진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를 상대로 힘겨루기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이해에 맞춘 법원의 개편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과 공정한 법치입니다. 법치를 정권의 방탄막으로 쓰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괴물독재국가로 전락합니다. 대법원은 정권의 호위 무사가 아니라 국민의 최후 보루입니다. 보복성 입법으로 법치의 뿌리를 흔드는 민주당의 발상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LG엔솔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맹국임에도 사전 통보조차 못 받은 유일무이한 외교 참사입니다. 사실상의 추방을 석방이라고 포장했습니다.

더 한심스러운 일은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지 11일 만에 동맹국이자 한미 제조업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군용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단일 사업장 기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은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막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사태 발생 사흘 만에 대통령실은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마치 큰 성과라도 거둔 듯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안도가 아니라 허탈감이며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동맹국에서 양손 결박을 당한 채 험한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약속을 하면서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언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과연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사실상의 추방을 석방, 무사 귀환, 핫라인, 얻어 낸 결실 이렇게 자화자찬하기보다 한미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명백한 외교 참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FTA 체결국 전용 비자 쿼터 할당과 숙련 기술자 특별비자 도입 등 비자제도 개선 협상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이번에 돌아온 국민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직은 생색만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국민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국익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구금 사태는 결국 국제 망신까지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도 인천공항에 나와 마치 인질을 구해 낸 듯 대단한 성과라도 낸 것처럼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사과할 자리를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한 것은 당연히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자화자찬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본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초 단속 당시에도 한국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분류해 수갑을 채워 감금했고 죄수복을 입히고 머그샷까지 찍어야 했습니다. 출국 절차도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출국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출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추방이었습니다. 일부는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몇 년간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압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의 자진 출국 안내서에는 자진 출국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빨리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표현되어 있어 재입국 시 불이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이 차단되고 향후 재발 가능성마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의 원인에 대한 책임조차 회피하는 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앞으로 이러한 외교적 사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를 공항에 나올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보여 주기 식 대응과 정치적 이벤트는 국민들께 실망만 안겨 줄 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포함한 어떠한 세력도 사법부의 독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러한 개입하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지는 그 결정권이야말로 사법권의 핵심입니다.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은 이러한 대원칙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내란특별재판부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인 것입니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명백하게 밝힌 것은 이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와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가 있었다며 내란특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헌법에는 특별재판부 허용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헌법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법관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려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고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 문서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한다면 그것은 모순일 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이긴 정파가 국민의 뜻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통해서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호 견제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헌법이 특별히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것은 선출 권력이 이러한 견제와 균형 원칙을 깨고 독주할 때 사법부만이라도 독립을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이긴 것은 국민이 입법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의회 아래에 두려는 이러한 시도들, 민주당이 시도하는 것처럼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뽑아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 국민의 뜻과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한 정파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러한 독재국가의 길을 가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국민의힘은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그리고 후속 기관을 만드는 과격한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시도는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범죄 대응 역량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게 됩니다. 막대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이러한 시도를 졸속으로 처리한 민주당과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형사사법체계는 결국 견제와 균형이었습니다. 조직이 방대한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검찰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지면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노만석 대검 차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제헌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있다며 공소청 명칭은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했

는데 합당한 지적입니다.

현 검찰총장권한대행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이름을 빼는 데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소청에 아예 보완수사권을 일절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사인력 재배치와 검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검사는 2292명, 수사관은 7829명인데 모두 공소청으로 갈 경우 법무부 산하라 전직할 필요가 없지만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갈 경우 검사 직함을 떼고 수사관이 됩니다. 고위 검사들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고 2년 안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검사로 강등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최고 수사 전문가들의 공백을 거악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는 되레 더 강화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더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3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을 더 늘린 더 센 특검법을 23일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별건·먼지털이식 수사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 범위와 규모를 확장해 민주당 검찰로 키우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을 넘어서 민주당 검찰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겠다는 그 저열한 의도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 탄핵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뉴스에 근거한 청문회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해체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태도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만극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라고 할 정도로 견제 장치도 미비한 공수처를 홍위병처럼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결국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재판을 끌지 말고 12개월 내에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빠르게 처리하자 사법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기한을 한 달 이상 넘겼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

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대법원이 법대로 3개월 안에 판결하자 대법원장 탄핵 등을 겁박하며 법원 압박용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는 데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선무효형이었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 가며 임기 4년을 다 채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최종심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정당을 만들고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결국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의 임기를 채운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모 의원은 1심 유죄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를 시도한 결과입니다. 더 재판을 끌기 어렵게 되자 휴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5개월이나 썼습니다.

자신들이 재판을 받으면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상대편 재판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내라는 법까지 만드는 것은 결국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헌법 위반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8일 내란, 김건희,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내란특판법을 발의했다가 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자 전담재판부로 포장을 바꾸고 범위도 넓혔지만 위헌 본질은 똑같습니다. 전담재판부로 포장 갈이를 해도 위헌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각 3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해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기존 안을 국회는 빼고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변협 4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추천위의 구성에서 국회가 배제돼 위헌 논란이 해소됐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대신 행정부가 재판의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더욱 또렷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법무부가 특판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법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격입니다. 심지어 판사가 형량을 깎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유죄 확정 시 사면, 복권, 감형도 못 하게 한 것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전담재판부를 김건희, 해병 특검 사건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법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3대 특검 재판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6개 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 등 총 21명의

판사를 단수로 추천해 사실상 추천위가 임명하게 한 것도 문제입니다.

재판의 녹화, 촬영,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또한 판결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을 유죄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할 인민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 독립을 흔들어 독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안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주당도 내란 전담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조차 이 법의 강행 처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끝내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면 당장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청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란재판부는 중지되게 됩니다. 중지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는데도 내란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압박하려는 용도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사건 혐의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별도 설치라는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러한 이유도 결국 지 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 뜻에 맞는 판결을 거두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사건 전담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위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편향된 판결을 하려 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지법도 민주당이 재판 지연을 지적하자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 자체가 결국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가짜뉴스 징벌법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짜뉴스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김어준 씨, 김 씨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하자 부정선거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영화를 발표하면서 2012년 대선은 통계적 관점에서 기획된 숫자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천안함은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양산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자극적인 뉴스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계엄 때 미국의 북폭 유도설과 정치인 암살조까지 주장했는데 아직도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김 씨를 비판하기는커녕 동조·가담했습니다. 그러니 김 씨가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명백한 가짜뉴스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이러한 법, 저는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법을 만들려는 진정성과 목적이 무엇이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 징벌법 적용 대상에서 유튜버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김어준 씨 유튜버를 포함해 친민주당 유튜브 3곳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포함했습니다.

○의장 우원식 박성훈 의원님, 잠깐만 중단해 주시지요.

○박성훈 의원 예.

○의장 우원식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실 소개로 경남 양산 상북초등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리 왔네요.

○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의장 우원식 국회에서 지금 하는 일은 무제한토론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왜 하냐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 법안을 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를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 찬반토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토론은 의원들이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밤을 새워 가면서 하는 토론이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나오셔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것은 이게 24시간, 지금이 5일 차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개 법, 4개의 법을 가지고 24시간씩 하다 보니까 5일 차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 조별로 해서, 안에 국회의원석 그리고 바깥에도 계시고 이렇게까지 해서 조별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이 없는 겁니다.

박성훈 의원님 토론하실 때 말씀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진행하시지요.

○박성훈 의원 예.

자기 편에 유리할 때는 언론이라 하고 아닐 때는 언론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튜버의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게는 제일 좋은 것은 징벌적 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 인물 중 한 사람이 김어준 씨라는 사실을 민주당도 다 알 것입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법을 만들고 김어준 씨를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정성과 의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비판 언론을 옥죄고 나머지 언론을 겁주려는 이러한 불순한 의도로 동법이 악용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결국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유튜버를 봐주는 게 아니라 다른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짜뉴스 징벌법에서 김어준 씨를 포함한 민주당 성향의 유튜버들은 제외해 주겠다는 그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 성향 언론단체들조차 이러한 시도는 언론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노동조합과 고용 경직성을 지목했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꺼리는 배경에 노조 이슈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아예 직무 전환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년 보장과 해고 금지 등을 앞세워 노조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 때문에 고용 경직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노조의 문제점과 고용 유연성을 언급한 것은 분명 평가받을 만한 일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바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비정규직 권리 보장, 초기업별 교섭 추진,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의 친노조 과제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고용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것들입니다. 고용 유연성을 위한 노동개혁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이 결사 반대한 노란봉투법도 강행했습니다. 노조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키워 신규 채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법입니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된 후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라는 주 52시간 규제도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도체산업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 고용 유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과 정책과 행동이 다 따로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년 연장, 주 4.5일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같은 요구 사항을 쏟아 내는 노조에 대해 대화 참여만 촉구했을 뿐 노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정책의 신뢰성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해외의 국제기구들, 특히 경제 관련 기구들은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노조의 고용 경직성을 가장 큰 해외 자본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로서 남을 수밖에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친노조정책 그리고 고용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법안들로 귀결될 경우 한국의 노동시장의 문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에게 15.9% 고금리는 잔인하다고 발언한 뒤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전반에 금융 포퓰리즘 발언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소득자에게 고금리는 역설적이라며 금융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경제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감성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얄팍한 감성적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냉철한 구조적 해법입니다. 차등금리를 복지정책인 것처럼 선동해서 왜곡하고 포장하면 결국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지켜 온 신용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진단부터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론한 고금리는 신용 하위 10%에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입니다. 이 상품은 매월 출시와 동시에 한도가 동나고 이용자들은 15.9% 금리라도 빌릴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입을 모으는 그러한 정책 상품입니다. 하지만 공적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율이 53.5%에 달해 재원 3000억 원은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결국 빌려주고 떼일 확률이 많은 그런 보증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급 규모를 올해 11조 8000억으로 늘렸지만 대위변제율이 25%로 치솟으며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습니다.

금융은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286만 명에게 신용 사면을 해 줬습니다. 이들이 다시 빌린 38조 원 가운데 74%가 아직까지 연체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갚으면 또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줄 방침이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위험식별이 어려워져 현재 9%인 연체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연 1% 극저신용대출도 연체율이 30%대 후반에 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서는 리스크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낮은 비율, 낮은 이자로 낮은 위험 리스크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신용사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높은 신용 위험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돈을 떼일 위험 때문에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신용질서의 기본 원칙이 붕괴되는 순간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신용 리스크를 가진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그러한 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해 은행은 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 줄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은행 대출로부터 오히려 소외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을 비롯한 신용도를 보지 않고 높은 금리를 수취하는 그런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채 정치 논리로 감성적인 구호로 접근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법도 잘못됐습니다. 휴면예금과 은행 출연금에 의존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이러한 사고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자에게 고금리라며 은행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라면 결국 도덕적 해이만 판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03년의 카드 대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올해 13조 2000억의 소비쿠폰 중에서 10%만 줄여서 지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신용 특례보증과 햇살론에 1조 3000억의 재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보증승수 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자의 금리 부담을 상당 수준 덜어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금리 연 1%의 저신용자 대출이 연체율 74%라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대출받은 사람의 39%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10명에게 대출을 해 주고 4명은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8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전체 대출액의 절반인 600억여 원은 상환받지 못한 채 결국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금융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금융 복지정책의 실패가 수치로 명확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금융을 복지 차원으로 접근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신용등급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11만여 명에게 연 1%, 최대 300만 원씩 빌려줬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연 10% 이상 금리를 물어야 할 저신용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것입니다.

경기도가 5년 만기가 도래한 올해 확인해 보니 4명 중 3명꼴로 돈을 갚지 않았고 10명 중 4명은 아예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6000여 명은 대출 신청 당시 아예 없는 번호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국판 주빌리은행을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금리는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돈의 가격입니다. 신용도가 낮으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금융의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의 고금리를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취약층이 높은 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원리를 무시하면서까지 필연적으로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의 몫이 됩니다.

금융을 복지나 자산 시스템과 혼동하게 되면 효율성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는 것을 경기도 사례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취약층이 높은 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금융원리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되게 되며 그 피해는 온 국민의 몫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를 보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고신용자가 이자를 0.1% 더 내 저신용자를 돕는다는 논리로 금융회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일종의 금리 궤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단견적인 시각입니다.

시장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억지로 금리를

낮춰 주는 것보다 저신용자의 신용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진짜로 취약층을 위하는 길입니다. 복지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높여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니 원전 대신 임기 내 성과를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AI 기술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을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 단가가 원자력의 5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AI 산업과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전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전 건설에 시간이 걸린다면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니 아예 포기하자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왜 미국은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200기나 짓는 계획을 세우고 유럽하고 일본이 탈원전 기조를 바꿨겠습니까? 지금부터 원전을 안 지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본격화될 AI 시대의 전기 수요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향해 국내 주식투자 비율을 늘리라는 취지의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증시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미리 국내 주식 비율을 점차 줄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건 30년 뒤의 일이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임기 내 주가 부양을 위해 연기금까지 동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임기 후에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로 주가가 떨어질 위험성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급증하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비율이 약 50% 정도를 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축통화국들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비 지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비 지출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들이 쓸 재정 여유를 남겨 놓지 않고 일단 되는대로 쓰고 보자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대통령은 단지 5년 임기만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국가는 지속가능해야 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가의 재원을 남겨 둬야 합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일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다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계

획으로 산업화를 이끌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로 무역 강국의 길을 닦았습니다.

임기 중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이러한 단견적인 시각, 단기적인 성과 창출 목표로는 국정을 지속가능하게 이끌 수 없습니다. 중장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국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

민주당의 반기업적 입법 독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과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권의 입법 독주에 제동장치는 없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사법부까지도 민주당의 손아귀에 장악되려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많게는 수천 개의 하청기업을 가진 원청이 1년 365일 하청업체와 직접교섭에 나서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법입니다. 경제계조차 기업들이 벼랑 끝 호소로 반대해 왔던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2차 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서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기업이 앞장서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민 전체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시장 법안들이 어떠한 속도 조절도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법인세율 인상 등 다양한 각종 반기업적 법안들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기업적인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빠져나갈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과 주한EU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했습니다. 특히 암참의 경우에는 한국이 아시아 외국계기업의 허브로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메시지를 내놓았고 주한EU상공회의소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철수 얘기까지 꺼내면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 결국 국가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

한 외국계 자본들이 다 빠져나간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것은 외환위기고 국내 산업의 고사입니다. 국가경제를 더 이상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미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이에 배치되는 경제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 9월 29일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가짜뉴스로 뒤덮였고 뻔뻔하고 대담한 대국민 사기극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 하고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 쿠데타와 폭주를 제동 걸어야 할 지도부도 양식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 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력 서열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고 말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사법부의 수장을 쫓아내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이미 정도를 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관련 직무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영구 집권을 향한 정치 보복과 권력 장악을 위한 집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당 해산 공세, 입법 폭주와 사법 장악만이 보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의 고해성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 앞에서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입법을 무기로 사법을 짓밟고 권력을 전리품처럼 쥐락펴락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기 고백에 국민들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자신의 무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할 자리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뽑힌 대의 권력이 전제군주와 같이 전권을 위임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정 질서가 규율한 대로 제한적 권력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의 권력기관 재편과 개헌 추진은 결코 국가 미래를 위한 설계가 아니며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위한 정치 공작의

설계도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외칩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독재와 사법 파괴를 막아 내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파괴와 민주당의 일방 독재, 일방 독주를 막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박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홍배)

(15시50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박홍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토론을 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님의 토론 내용 그리고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첫 필리버스터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몇 가지 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2주 전 대정부질문에서 몇 가지 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느꼈던,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올렸습니다.

그 사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보급·확산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특히 뉴스와 같은 부문에서는 경계가 거의 허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뉴스들을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내용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이상한 뉴스, 가짜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국내 투자 관련 기관들에게 묻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는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요지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쟁들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자 다른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정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익에 관련되는 경제문제 그리고 외교·안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박성훈 의원께서 몇 가지 경제 그리고 노동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금융과 같은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분명히 새겨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와 같은 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때문에 마치 곧 국가신용도가 하락할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신인도는 CDS라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redit Default swap)라는 상품의 가산금리에 따라서 시장에서 확인됩니다. 어떤 회사 또는 어떤 국가의

부도 위험이 올라가게 되면 그 가산금리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부도 위험이 줄어들게 되면 그 가산금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 그리고 올해 4월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당시에 한국의 CDS 가산금리가 약 40bp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17bp 수준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 정도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20bp대 초반 정도, 그래도 비상계엄이 났을 때보다는 절반 이하로 한국의 신용 부도 위험은 줄어들어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 신평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 정책이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만들어 내면 안 됩니다.

반면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아마도 의원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통령 직무까지 대행을 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국제 신평사를 만나야 된다며 국회 본회의장 출석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해외 신평사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도에 대해서 매우 큰 경고를 해 왔기 때문에 국회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피치사는 '한국이 지정학적 도전과 국내 정치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매우 면밀히 보고 있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워칭 콰이트 클로즐리(watching quite closely)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직 등급을 변경하지 않았고 과격한 변화는 없을 것' 쪽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면 부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포한 것입니다.

무디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약한 경제성장 전망, 지정학적 환경 악화, 구조적 제약 등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신평사 KIS는 정치적 혼란과 대립, 국가신인도 및 경제에 악영향 우려를 하며 금융시장 지표 변화, 즉 원-달러 환율 상승, CDS 프리미엄 상승 가능성 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 강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됐고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도 오늘 또다시 코스피가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한 가지 굿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코스피는 다시 50p가량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기록을 연속으로 경신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 갔던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평가고 세계 투자자들의 평가입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투자자들이 떠나간다 이런 거짓말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주 52시간 고용유연성 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용유연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안정성이 따라야 되고, 안정성이 따르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튼튼히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재정 상태가 그렇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겨우 9개월 정도 지급하는 수준으로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유연성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시간이 아니라 OECD 국가에서 아직도 다섯 번째로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 OECD 평균의 150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장시간 국가 문제를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당시에 문제됐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 제도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점도 첨언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저 개인적으로 크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모두 신청했었지만 순서가 뒤로 밀렸었고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는, 이번 4일간의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첫째 날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도 역시 뒤 순서여서 제가 토론에 참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오늘……

○의장 우원식 박홍배 의원님 잠깐만요.

오늘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이 의원실 소개로 전남 목포용호초등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인데요. 본회의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반대를 해서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 의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법안이 4개가 있어서 5일째 밤을 새워 가면서 토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조를 짜서 하기 때문에 좌석에 앉아 있는 분과 뒤의 휴게실에 앉아 있는 분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5일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 의원이 이 법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 찬성토론을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홍배 의원 용호초등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희 집, 저의 세 번째 자녀도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아직 찬성토론의 본론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필리버스터를 맞아서 느끼고 있는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인 국회증언감정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국회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간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분이면 토론이 끝날 내용을 24시간 동안 토론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왜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둘째, 국회법에 따른 무제한토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필리버스터, 저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44시간째 무제한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은,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 두 분만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을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젊은 청년일지라도 버거운 일정입니다.

지난 4일간 총노동시간으로 보면 48시간입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그간, 지난주에 일하셨던 노동시간들 합쳐서 의장님, 부의장님의 노동시간이 이번 주 70시간, 80시간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과로사의 기준에 들어가는 초장시간 노동입니다.

우리 국회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 당의 당직자들은 어떻습니까? 각 당의, 각 의원실의 보좌진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곳 본회의장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데 시내에 가서 집회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명 말씀을 하셨던데 1만 5000명이었겠지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면 무제한토론에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제한토론을 중단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4일째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제가 한 달 전 이 시점쯤에 이런 필리버스터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6박 7일인가 8박 9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법안들이 올라올지 아시는 분들이 계셨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법안 내용이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법안 올리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사회 안 보실 거면 필리버스터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회는 36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겨우 365건의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회법이 허용한 소수 정당을 배려한 정당한 의사진행방해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에 대한, 여당에 대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수권정당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여당이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휩쓸고 있는 극우주의는 아주 짧은 순간의 열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을 휩쓸고 있는 극우주의,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당 의원들, 당직자뿐만 아니라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 시대의 소명이 내란 청산과 민생회복, 경제성장 그리고 혁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지난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 재발을 막는 장치들을 국회에서 만드는 데 협조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거대한 위기,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또 온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들, 민생의 어려움들, 이 경제위기들을 극복하는 데 함께 집중하자고 호소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5선 의원께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다소 생소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회의 권위, 국민의 신뢰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같은 선서에는 반드시 같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25일 한겨레 기사를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피하고 말 더듬던 한덕수… 국회 위증 순간, 다시 보니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위증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 뱉었던 발언들과 당시 표정, 말을 더듬었던 순간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6일 오전 10시 52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

부승찬, 피피티 한 장만 띄워 주실래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한덕수, 예,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연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승찬,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한덕수, 예.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부승찬, 그때 그러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까?

한덕수, 기사에는 '눈 동그랗게 뜨며 처음으로 부 의원을 보는'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부승찬,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한덕수, 예. 저, 이, 이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제가 저, 그, 우리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연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 있냐는 부 의원의 질의에 내내 화면만 응시하며 양복 뒷주머니 이야기를 했다. 이에 부 의원이 '거기

에 놓여 있었냐'며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한 전 총리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처음으로 부 의원을 응시했다.

부 의원이 거듭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은 거 아니냐'고 추궁하자 한 전 총리는 말을 더듬으며 나중에 보니까 저런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본인은 비상계엄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을 막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질의는 종일 계속됐고 오후 5시 32분 이번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 전 총리에게 물었다. 이때 한 전 총리는 오전보다도 자연스럽게 질의자를 보거나 말을 자르기도 하면서 대답했다.

용혜인,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 역시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아 갔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한덕수,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용혜인,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판결을 훼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덕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혜인,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 저는 분명히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용혜인,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이겠지요. 총리가 받은 게 없다면 총리가 받은 게 없다는 지금의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에게도 줬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당연히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겠지요.

한덕수, 총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 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00여 일이 지난 최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당시 발언들과 배치되는 물증을 확보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로 대통령실에 왔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뒤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다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국회와 헌재에서의 위증이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데 고발 주체인 내란국조특위의 해산으로 위증을 고발할 위원회 자체가 존속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도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당시 용 의원은 질의 말미에 '40년 총리의 공직 생활을 지탱해 준 국민들 앞에서 진실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전 총리에게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우리 국회가 그동안의 여러 현안질의나 관련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물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에 기초를 두고 저의 마지막 이 자리를 충실하게 마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진술해 왔다'고 말했다. '진실을 국민들 앞에서 더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추가적 진술을 해 달라'는 용 의원의 마지막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조금도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조금 전 기사는 2025년 8월 25일 한겨레의 기사였습니다.

3일 뒤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계엄 방조·위증 한덕수 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는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이상 읽어 드린 하나의 기사와 하나의 사설은 우리가 오늘 본회의에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 중의 일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언대에 선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거짓말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발 권한이 위원회 활동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가 종료되면 아무리 명백한 거짓말이라도 고발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위증이 발생했음에도 위원회 활동 종료와 함께 고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 앞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채 국회가 스스로 무력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국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무려 128건을 고발했었지만 그 사건들의 대부분은 무혐의나 종결로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의무를 다해도 수사기관이 책임을 외면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증 고발이 의무라 하더라도 실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국민은 국회를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쇼만 벌이는 무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현행 제도의 첫 번째 한계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입증 곤란입니다. 법적으로 위증을 입증하려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도를 넘어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 발언은 대체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일부 로펌에서는 이렇게 자문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달라도 고의로 거짓을 말한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위증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정치적 타협입니다. 법은 위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발하라고 하지만 실제 고발 여부는 여야 협상에 따라 좌우됩니다. 고발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면서 제도의 취지는 흐려지고 국민 눈에는 국회가 거짓말만 하는 기관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국회증언감정법은 그 조문 자체는 매우 엄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증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같은 특위에서의 위증은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같은 선서를 하고도 다른 책임을 지우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 눈에는 모두 똑같은 청문회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거짓말 청문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증 고발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특위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지만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발언은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위증 고발은 없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체계와 지휘 라인을 둘러싼 핵

심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슬픔은 컸지만 위증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선서를 했는데 어떤 청문회에서는 책임을 묻고 다른 청문회에서는 면책이 주어진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 눈에는 모두 같은 청문회인데 법은 책임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을 같은 선서, 같은 책임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모두 청문회의 성격과 상관없이 위증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와 동시에 의회 모독죄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청문회, 엔론 회계부정 청문회, 의회 난입 청문회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은 하원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의회 모독으로 간주해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납니다. 일본은 국회법에서 위증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독일은 형법에 의회 증언 위증죄를 별도로 두어 법정의 증언과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 원칙은 분명합니다.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이든 국회에서의 같은 선서에는 반드시 같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만이 안타깝게도 아직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갖는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째,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에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국회의장이 고발을 하는 것으로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또는 고발이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공백을 메웠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수사 해태에 대한 방지책입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 사건과 관련된 수사들은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 기간 또는 연장 수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해 둔 것을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급입법 위헌 논란 그리고 정치적 보복 우려, 권한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모든 반대 명분을 제거했습니다.

첫째, 소급입법과 관련된 국민의힘 주장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칙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정치적 보복 우려는 본회의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로 차단했습니다. 권한남용 우려 역시 절차적 안전장치로 봉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 위증죄의 합헌성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제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 논리에 불과합니다.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기업 대표가 거짓말을 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금융비리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가 사실을 은폐하면 국민 세금이 왜곡된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환경참사 청문회에서 공직자가 허위진술을 하면 피해자는 끝내 보호받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국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은 선서, 같은 책임 이것이 국민의 세금과 안전·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결코 국회 내부의 절차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필요가 없었던 이번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금쪽과 같은 24시간의 국회의 시간이 발목이 잡힌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시중에서 그리고 또다시 있을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69박 70일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발목 잡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응급의료법, 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의 권리를 넓히는 장애인복지법,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관리법,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주는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이 모든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권리, 환경과 미래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라는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생은 결국 이 국회 본회의장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권리, 청년의 일자리와 직결된 법안들이 모두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법적 안정성은 보완되었고 권한 남용은 차단되었으며 소급입법 논란도 해소되었습니다. 무제한토론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강행되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무제한

토론이 아니고 그저 정당들을 위한 정치놀음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국민 앞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민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증을 고발하지 못해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의결하면 그 위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끝나서 고발 주체가 사라지는 특별위원회에서도 추후 위증이 밝혀지면 법사위든 본회의든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 법을 둘러싼 공방은 주로 법 시행 이전에 활동의 기한이 종료된 이른바 내란국조특위와 같은 위원회에서의 위증 발언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부칙 조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진술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고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기에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해를 차단하고 이를 요구해 왔던 야당의 입장과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한 뜻도 있었습니다. 소급은 지워졌고 원칙은 세워졌습니다.

국회는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국회의 모든 기능은 진실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분들에게 진실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증언의 진실과 허위 여부가 즉시 판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대조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주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 흘러야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란공범 한덕수, 최상목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나중에 특검을 통해 밝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임위냐 특위냐 그리고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이 언제냐, 본회의 처리 시기가 언제냐와 같은 달력과 절차의 우연에 따라 같은 위증이 다르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시간 끌기가 사실상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결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에 의해 책임의 경중이 갈리는 이 불합리한 구조,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출발점입니다.

수정된 개정안의 핵심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시행 이후 특위가 해산되어도 드러난 사안에 대해 위증이 밝혀지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을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 경찰로 다변화해서 지연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수사 중간보고와 연장 요청을 명문화해서 지연과 불법 방치를 차단했습니다.

넷째, 위원장이 고발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의 연서로 위원의 다수

이름이 걸린 책임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위 해산 등으로 고발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의 명의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의 공백을 막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종료된 특위 조사 사안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부칙의 위헌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칙이 존재했더라도 위헌은 아닙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헌법 제1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가벌성, 즉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를 과거로 거슬러 바꾸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반면 고발의 주체, 고발의 절차, 공소시효와 같은 영역은 소송 요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벌성을 손대지 않는 절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직접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덕수가 내란국조특위에 나와서 했던 위증은 그 자체로 범죄이고 고발을 못 했다 하더라도 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헌법재판의 일반법리는 공소시효 연장·정지와 같은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판례가 정리되었습니다. 즉 얼마 동안 소추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형벌불소급 금지의 핵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진정소급입법을 문제 삼더라도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1. 종전 상태가 법적 불안과 혼란을 낳아 신뢰이익이 약할 때, 2. 소급으로 인한 개별 불이익이 없거나 경미할 때, 3. 신뢰보호보다 월등히 중대한 공익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됩니다.

본 사안은 어떻습니까? 상임위나 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 등 우연한 절차 변수로 같은 위증이 다르게 취급되는 불안과 혼란이 존재해 왔습니다. 국회 증언의 진실성 확보는 입법, 예산, 국정 견제라는 국회 핵심 기능을 지키기 위한 월등히 중대한 공익입니다. 형벌을 신설하고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개별 불이익은 경미합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합헌 정당화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쟁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하고 합의를 우선하기 위해 부칙을 삭제했습니다. 오해의 차단과 합의 우선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청문 조사에서 위증이 드러나면 그때는 지체 없이 책임을 묻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드려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우리가 왜 지금 이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덕수의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계엄 문건을 몰랐다는 취지의 국회와 헌재에서의 발언이 허위였는지 여부를 놓고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내란 방조 혐의로 특검은 기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객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증언이 사실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지금 법정에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종종 뒤늦게 도착합니다. 자료 대조, 추가

조사, 영상·문서의 복기 등 이 모든 과정이 특위가 종료된 이후에야 마무리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특위 종료와 수사 지연이 겹치면 또는 그 둘 중 하나만 작동하면 책임 추궁의 문이 닫히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문을 앞으로는 다시는 닫지 말자는 것 이것이 오늘 상정된 법안의 취지입니다.

둘째,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른바 계엄 쪽지를 둘러싸고 전달 경위와 확인 여부에 관한 진실 공방 그리고 휴대전화 교체, 사용 내역과 관련한 번복 등도 있었습니다.

지난 12·3 내란국조특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 즉 비상입법기구 예산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전달했지만 읽지는 않았고 무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CCTV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해 실제로 쪽지를 수령, 인지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조특위에서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기기 변경 내역이 제시되어 진술을 바꾼 바도 있습니다.

이 또한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누가 어떻게 책임을 묻는지 그 절차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특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수사기관에 2개월 중간보고·연장요청을 의무화하는 것, 이러한 장치들이 바로 그 사후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 CCTV 공개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민의힘 측의 사전 모의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공식 요청 전 법원 등 제출용으로 허위 표기된 내부 서류의 준비, 증인신문 직전 공개, 특정 영상은 신속 제출, 다른 영상은 보류 등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실은 늦게 도착할 수 있다.

이제 절차가 왜 필요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3 사태의 사전 모의부터 선포, 동원, 의결 방해, 해제 지연, 수사 주체 논란까지 의사 결정 전 구간을 두 달 동안 전면 점검했고, 대통령실 국정원 국방부 경찰 검찰 공수처 합참 등 핵심 기관장 보고와 공개 청문으로 여러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기간으로 인한 최종 진실 규명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통로를 법으로 열어 두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국조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읽기 전에 5선 나경원 의원과 달리 초선이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의장님이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의장 우원식 예.

○박홍배 의원 의장님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에 보면 이 무제한토론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02조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라고 해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에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다른 토론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일까요?

○의장 우원식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박홍배 의원 저는 이 부분을 꼭 의장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만 4일 동안 많은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처리하고자 하는, 그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5선 나경원 의원과 달리 초선이어서 다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논의되고 발의될 수밖에 없었고 오늘 꼭 처리되어야만 하는 그 원인이, 단초가 제공된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온 국민들을 사지에 내몰아 넣고도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댔던 바로 그 내란의 죄인들이 국조특위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지난 3월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입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하였음.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힘.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포고되었음.

경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47분부터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고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 신분 확인자 출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23시 37분부터 전면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직원 등이 국회 경내를 출입하지 못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군병력이 국회로 출동하여 23시 49분경부터 군 헬리콥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였고 육상으로 출동한 병력들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월담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무단 진입하였으며, 12월 4일 0시 44분경 특수전사령부 소속 일부 병력 등이 무장한 채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본관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음.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1시 1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헌법 제77조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것임.

12월 4일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6일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 체포하였고 경찰은 12월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였으며 12월 11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인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2024년 12월 31일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음.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음.

2.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 및 원인 규명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여부

국방부, 비상계엄의 주요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증인 등에 대한 조사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관보고,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다른 수사 및 재판 기관에서의 공개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리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음.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음.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함.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치고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런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이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계엄이 될 상황이 아니고 될 수도 없으며 특전사 대원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김용현 장관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진술함.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은 2024년 11월 9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방사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현장조사에서 조사특별위원장은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윤석열·노상원·김용군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구치소 측은 윤석열·노상원·김용군 증인을 만나 현장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들은 모두 현장조사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힘.

국방부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를 국방부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 관련 준비를 함.

노상원은 2024년 11월 정보사령관,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함.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0월 29일 수호신TF단장,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 등과 여의도 변전소에 가서 여의도 변전소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변전소장은 여의도 지역에 단전이 되지만 우회 선로가 있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변전소를 점검한 이유는 국가중요시설 72개 중 부하들이 추천해서 갔다고 증언함. 이에 대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변전소 단전으로 국회 등의 기능을 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국회 봉쇄 시 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국가중요시설 설계도면을, 그것도 국회만 꼭 찍어서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수도권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1일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고 노조·야당·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차관은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 운영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함.

원천희 증인(국방정보본부장)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현황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함.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미 계엄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21시 20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방첩사 복귀명령을 내리고 23시에는 체포조 구성을 하라는 지시도 직접 내렸다는 질문에 대하여 김대우 증인(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체포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본부 100명 그리고 경찰 100명 병력을 요청받아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을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사관들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으며 수사관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정문에서 많이 떨어진 길에서 승차한 채로 대기 조치하였다고 진술함.

김대우 증인은 정치인 체포와 이송과 구금의 전 과정을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함.

구민회 증인(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경찰이 체포하고 방첩사가 이송, 구금을 하는 체포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함.

이선진 증인(무속인, 일명 '비단 아씨')은 2024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러 군인들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알려 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차례 물었다고 진술함.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사용되는 벙커에서 계엄 당일 아침부터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효 증인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증언함.

다음은 행정안전부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신청과 관련하여 단 10분이면 되는 찬성토론을 한 시간 반가량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내용은 지난 3월 국회본회의가 의결한 내란국조특위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읽어 드리고 있는 이유는 당시 국회에 나와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한 위증을 했던 한덕수, 최상목 등이 뻔뻔하게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되지 않은 이 문제점을 고치고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고 진술을 했고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고 너무 내용이 지겨우니 다른 내용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국회법 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조항에 따라 오늘 상정되는 법안에 충실하게 토론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상민 증인은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점심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증언 거부 아니면 거짓말로만 일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입니다.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계엄 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 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지시 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현수 증인(경찰국장)은 계엄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창복 증인(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부분과 대통령경호처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조특위가 계엄선포의 원인과 국가비상사태 야기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두 번째 예산안 논의 부분은 넘어가고 부정선거 의혹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인성환(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2024년 한 해에만 7~8회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하였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음.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가안보실 명의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증언함.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 공유된다고 답변함.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함.

다만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한 바 있음.

강호필 증인(지상작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에 대한 언급은 듣지 않았으며 경고사격의 필요성에 대한 전화를 받았으나 기존 대응 기조와 매뉴얼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함.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당 요원은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제2차장실 소속이 아니고 과거 HID 경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으로 이번 계엄과 무관하며 특정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언함.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오 모 증인(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은 국가안보실 내 비밀 TF의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 없다고 증언함.

기타,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함.

명태균이 2024년 11월 15일 구속되기 전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현재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관한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신청이 있은 관계로 국민의힘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킬 원인을 제공한 한덕수·최상목 등의 위증이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증감법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하지 못했던 지난 내란국조특위의 보고서 내용에 그들이 어떻게 위증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보고서 44쪽 내용을 잠시 함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8.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및 체포 명단 관련.

홍장원 증인(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계엄 발표 이후인 22시 53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며 방첩사에 필요한 자금과 인원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목적어는 없었으며 구체적 대상은 23시 6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해주, 이학영,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총 14명)를 체포하라는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함.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 사항과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11시 30분 정무직 회의 때 보고했다고 증언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이어 ‘그런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

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지요’라는 답변을 들었음. 이에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지요’라고 건의했으나 보고 자리를 피해 버렸다고 답변함.

조태용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 사항을 받은 것은 없으며 홍장원 전 제1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일 밤 11시 50분경에 보고받았으나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고 정치인 체포 등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였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직속 부하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보고하는데 국가정보기구 수장이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정무직 회의에서 계엄 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이해했다고 답변함.

윤석열 대통령이 22시 53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한 다음 22시 56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사실을 원장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국가정보원장이 국무회의 소집 전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한 것은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의미이므로 내란 가담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동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비상계엄 현장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원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함.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전 수사단장)은 23시경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정치인을 신속하게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치인 체포 대상 14명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구금 지시를 분명하게 받았다고 증언함.

다음 보고서 내용은 주요 정치인 체포 이행 방안인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란국조특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네 분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자리에 계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들으시면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날까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페이지로 되어 있는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 9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 내용입니다.

김병환 증인(금융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은 경제적 효과는 진행 중이어서 이 단계에서 평가할 수 없으나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구체적으로 초기에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바 70원의 환율 상승분 중 약 30원 정도가 계엄의 영향으로 추정하며 올해 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p 하향 조정한 것의 반 정도는 계엄 영향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증언이 있었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내란국조특위의 종합의견은 분명했습니다. 12·3 내란사태는 국회 통제권을 배제하려 한 헌정질서 훼손의 위기였고 사실은 뒤늦게 도착하며 그 사이에 절차는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 위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란혐의의 중대성, 그날의 진실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개정안은 정치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한 소급조항을 지웠습니다. 그 대신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종료 뒤에도 법사위원장이든 국회의장이든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의 연서로도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반영되지 못했던 수사기관의 다변화 조항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단위의 중간보고와 연장 요청으로 수사기간의 지연과 수사 해태를, 방치를 차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발만 그리고 수사는 독립기관인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소급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권한 남용은 차단되었습니다. 법적 안정성도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당한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그저 여당을, 그저 정부를 발목잡기 위한 정쟁일 뿐이고 정치적 몽니일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 국민의 안전, 국민의 권리가 걸린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정치적 지연입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 권위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명분 없는 몽니로 무력한 국회로 계속 남을 것인지. 저는 그 답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 앞에 시효는 없습니다. 같은 선서에는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국회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의 세금은 성과로, 국민의 알권리는 보호로, 국민의 신뢰는 회복으로, 이제 국회가 이 원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모든 민생법안에 대한 모든 필리버스터 이러한 얘기가 결코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노동사안도 좋습니다. 토론, 언쟁, 정쟁 모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국익과 관련된 부분, 우리 민생에 관한 사안, 외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과 성장, 개혁의 전진하는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홍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17시43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반대 표를 행사해 주실 것과 국민 여러분들께 본 개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은 국회 위원회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경우 법사위원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 하지만 이 법안의 실체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한 고발권까지도 독점하겠다, 민주당 입맛대로 모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독재법안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걸림돌이 되는 반대 세력이라면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가차 없이 겁박하고 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사냥 면허법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10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7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상임위원회와 다수의 상설 또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전부에 대해 민주당 단독 또는 범여당 의원들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회에서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한 고발 안건을 표결할 때 무조건 민주당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이 법안까지 통과·시행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까지도 민주당 뜻대로 고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야당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아무리 고발을 하려 하여도 재적위원 과반수를 넘지 못하므로 위원장 판단과 다르게 위원들만으로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사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민주당이 범여당 의석까지 합하면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고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위원회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해 모든 경우에 다수당인 민주당 마음대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증 또는 허위 감정임이 명백할 경우에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필요하다면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위증 또는 허위 감정이 아니어서 야당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라도 민주

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이거나 감정이면 위증이나 허위 감정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덮어씌워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여론몰이와 정치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몰이와 정치탄압을 통해 민주당은 완전히 국회를 장악하려는 것이고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민주당의 전 정권 인사와 야당의 탄압을 위한 마녀사냥식 정치사냥 면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부로 넘어간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법안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내란몰이용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전 정권 인사와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든 법안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불과 몇 개월 만에 100여 가지 이상의 실정과 국정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 실정과 국정 파탄 사례들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실정과 국정 파탄이 확인될 것을 대비해서 본 법안을 만들어 위증과 허위 감정 이슈를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전 정권과 야당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은 야당 탄압용 법안이면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이름을 빌려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재 법안이며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나라의 법률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보편타당한 상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법 원칙에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사회가 합의하여 만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까지 무시하고 넘어서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빌려 야당을 배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독재 법안이자 대화와 타협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증언과 발언은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그 실수까지 고발될 수 있고 정치적 판단과 목적 때문에 국회에서의 토론과 심의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이 법안은 치명적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고발로 사회는 양분되고 반목이 계속될 것이고 국민들 간의 신뢰는 사라져 갈 것이며 모든 국가경제, 안

보, 국민 생활 전반으로 큰 피해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까지 정권을 잡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보여 준 실정은 국정 곳곳에서 심각한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국방, 외교, 교육, 경제, 환경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이러한 실상을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라의 모습을 만든 국정 참여자들도 하나같이 감도 안 되는 인사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사건을 변호하였던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비 대신 공직을 하사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매변매직 논란까지 벌어지는 낙하산 인사들로 핵심 공직을 채우고 있으니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내란몰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반대 정치세력을 축출하고 말살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의회독재를 하고자 버젓이 이러한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을 하다 하다 이제는 자기들 눈에 벗어난 인사들을 고발하겠다, 정권의 칼잡이 역할을 하는 공수처에게 제물로 던져 줘서 물어뜯고 할퀴게 하겠다, 그것이 이 법안이고 그런 법안까지 이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치놀음,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고 국민들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회초리를 드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문제점들과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뿐만 아닙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입법권을 악용해서 정치보복 도구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 낼지 모릅니다. 정쟁과 정치보복을 위한 독재법안, 이 법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그리고 반대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이러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다수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야당의 의견은 물론 위원장의 신중한 판단마저도 무력화시키고 고발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고 오로지 다수당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의회독재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다수당의 힘으로 야당을 강제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반대편을 용납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됩니다. 이 법안은 반대자를 탄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침묵을 강요하려 합니다. 이러한 발상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을 배제하고 오직 다수당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적 본질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결로만 오독하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며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다수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감정이 나왔을 때 이를 위증 또는 허위 감정으로 몰아붙여 고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위증 여부는 법정에서 엄격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그 판단을 정치적인 다수결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보십시오. 증언이나 발언은 때로는 불완전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대로라면 다수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한 실수나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것도 위증으로 둔갑시켜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소신껏 증언하고 누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판단과 목적 때문에 국회에서의 토론과 심의는 부실해지고 국민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정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야당 인사가 소신 발언을 할 때마다 정치적 고발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활발한 토론의 장이 특정 세력의 입맛에 따라 재단되고 통제되는 암울한 공간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또한 자의적인 법 적용과 정치적 보복의 제도화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국가 통치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란 국가권력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미리 정해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 앞의 평등 또한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법의 자의적 적용과 정치적 보복을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거나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위증이라도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증이나 허위 감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 인사에게 불리한 경우 다수당의 뜻에 따라 '위증 의심'이라는 명문을 덧씌워서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다수당의 판단이 곧 법적 고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법적 판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친고죄의 고발과 같은 요건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설과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 국회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 고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위증죄의 처벌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겠다, 다수당에서 결정을 하면 어느 누구도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위증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위증이라는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국회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사의 권한을 국회에서 갖겠다고 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전 정권 인사와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용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숙원을 풀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 행하는 정치적 보복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둘째,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언뜻 보기에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지게 하려는 정의로운 취지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정치적 판단과 목적에 따라 다수당이 마음대로 고발권을 행사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고 현재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경우가 해당되는데 그 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직접 체득한 자료나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스란히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각 위원들의 판단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의 위원회에서의 판단과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더 정치적인 요소가 판단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앞서 드린 여러 법적 문제점들과 동일한 위헌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처럼 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고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더 합리적이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가장 편리하고 직접적인 그러나 가장 위험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

정 세력에 의해 고발이 좌우될 수 있는 정치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도구를 국회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칼춤을 춰 대겠지만 언젠가는 이 칼자루가 상대방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에 스스로 칼을 겨누는 것과 같은 이런 법안을 민주당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정치적 남용과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은 국회가 결코 택해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까요? 이 법안의 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2025년, 금년 9월 2일 자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한, 영장 기각에 내란 프레임 제동 걸리자 다시 입법 폭주 시동'이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겠지요.

기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세력 척결이 시대적 과제라며 이른바 내란 특별법 입법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범죄인이 소속된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며 이후 국고보조금은 주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집권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제1야당을 말살시키는 입법 폭주 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 대표는 내란 척결이 해방정국의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공격했던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 적들인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청산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선 그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정 대표는 당대표 당선 사흘 뒤인 지난달 5일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훼방꾼이라고 국민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다고 했다. 1948년에도 반민특위 내 특별재판부를 둔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 등을 하다 역풍을 맞아 중단한 적이 있다. 집권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은 했지만 사법부 독립 자체에 반하는 입법은 시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 27일 내란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본건 혐의에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 했는데 한덕수 영장 기각이란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까지 원하는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내란 특별법을 꺼내 들었다. 정 대표와 당권을 다투던 박찬대 의원이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7월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1·2심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별영장 전담 법관도 따로 두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재판을 못 하게 했다. 재판부 구성은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9명이 결정하게 했다. 추천위원 3명은 국회의장이 민주당·조국혁신당과 협의해 추천하고 3명은 판사회의, 3명은 대한변협이 추천하게 했다. 한 법조인은 자기들이 원하는 판사를 임명해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이는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상참작에 따른 감형도 못 하게 해 놨다. 입법으로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법부의 양형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정당 해산도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도 내란특별법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안은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가 소속됐던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반환하게 해 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다.

여권과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내란특별법은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불을 때는 것인데 정부와 논의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를 주장했던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법원에서 먼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판사들을 전보 조치나 징계하면 굳이 입법 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게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 강성 지지층에 끌려갔던 민주당이 내란특별법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것이 지난 9월 2일 자 언론 보도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8월 27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그 기각 사유 중에 본건 혐의에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 했는데 한덕수 영장기각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내란특별법 등 입법폭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까지 원하는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9월 22일 자 중앙일보의 기사도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와 같은 기사입니다. 9월 22일 자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여, 한덕수·최상목 정조준 더 센 증감법 상정…… 야, 특검 하명수사'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정조준한 더 센 증감법—즉 국회증언감정법이지요—개정 절차에 착

수했다. 한 전 총리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특검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하명수사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운영위는 이날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감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문제의 증언이 나온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겨냥한 입법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관련 서류나 문건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그러나 내란특검팀이 계엄 당시 현장 CCTV를 확보하면서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계엄 당일 문건 내용을 살펴보거나 서로 논의한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현행 증감법에는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징역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처벌이 가능하지만 소관 위원회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이미 활동기한이 종료된 특위는 고발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거 위증 사례를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번에 수정안 올라오기 전의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제13조 1항에 명시된 형벌불소급의 원칙, 즉 범죄행위 시점에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추후 제정된 법률로 소급해 처벌할 수 없는 원칙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국회 법제실의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증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증감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증인·감정인 등을 고발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 인사청문소위원회를 설치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정보를 별도 심사하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상정도 주도했다.

민주당은 23·24일 열리는 국회운영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증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25일 국회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해서 증감법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에 하명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또다시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범죄자 소굴인 이재명 정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정조준한 더 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이를 특검 하명 수사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다음 날 난 기사입니다. 9월 23일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목이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법안소위 통과…… 야, 한덕수 겨냥 악법'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증언감정법 여 주도로 운영위 소위 의결…… 특위 해산해도 의장 명의 고발 가능.

국힘, 반발 속 퇴장…… 과거 특위서 있던 수많은 사안들 모두 고발 가능한 셈.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는 이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전용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국정조사특위 등 활동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회가 증인·감정인 등을 고발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과거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증죄와 관련해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사실상 다수당과 그 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해 왔다. 국정조사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 전임 정부 인사들이 국회에서 한 위증을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한 전 총리와 정 전 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항에 대해 위증이라고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는, 수정안에서는 빠져 있지요.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사 내용은 본 개정안이 운영소위를 통과했고 과거 특위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

안들이 모두 고발이 가능한 셈이라는 등의 이유로 야당이 반발해서 소위에서 퇴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는 표결까지 거쳐서 원래 소급입법까지 포함된 부분을 개정안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형사처벌과 관련된 절차법 조항도 소급입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스스로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 놓고도 그렇게 바꿨다고 해서 소급입법이 아니고 위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그 개정안을 빼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소급입법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언제 또 발의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안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운영위에서 표결까지 하고 법사위로 넘어가서 또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억지로 헌법상 규정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이 조항을 법안에 욱여넣고도 결국 스스로 본회의에서 뺐습니다. 운영위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표결까지 했던 그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 다 어디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 부분을 뺐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향후에 이런 입법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3개의 언론 보도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결국에 정부 인사를 내란몰이 해서 처벌하려 했지만 정상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겼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 눈치도 봐야 되니까 전 정부 인사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속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처벌시키기 위해서 본 법안을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인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소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비판이 일자 급하게 소급하는 내용을 뺐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운영과 관련된 법안을 호떡 뒤집듯이 찍어 내고 있습니다. 속칭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 다니면서 위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인사 탄압, 야당 말살만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한 축인 사법부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대놓고 버젓이 길들이고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장기 일당 독재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장악했고 야당 말살을 통한 완전한 입법부 장악, 그다음 사법부를 장악하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면죄부를 만들고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겠지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장기 일당 독재 체제의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려 두고 차근차근 일사불란하게 실행하면서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가차 없이 내란세력, 내란동조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제거하고 매장시키려는 것이고 이 법안이 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장기 일당 독재 체제를 목표로 진행해 왔는지 보겠습니다.

대선 전인 지난 3월 26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사필귀정 아니겠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재판에 깊은 존중과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 주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요.

또 2025년 4월경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5월 1일로 잡았을 때만 해도 민주당 안팎에서는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배경으로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빨리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대선 행보에도 긍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도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에 대해 불만 제기가 없었고 오히려 무죄로 사법리스크를 털고 갈 수 있다는 이유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대선 하루 전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대법원으로부터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라는 말을 전해 듣고 '고맙구나. 빨리 해 주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 전까지만 해도 신속한 재판 자체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니까 이때부터 이재명 당시 후보자부터 민주당과 그들의 강성 지지자들이 조직적이고 결사적으로 사법부에 대해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겁박을 해 대기 시작했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대법원 선고가 마치 제2, 제3의 내란인 것처럼 선동하는 발언을 했으며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마치 대법원으로부터 억울한 사법 살인을 당한 것처럼 선동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후보는 5월 14일 대선 유세에서 '내란 수괴뿐 아니라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 5월 15일 대선 유세에서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 깨끗한 손으로 판결해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지금 행안부장관이시지요, 이분—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던 윤호중 총괄본부장이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광석화처럼 선고 다음 날인 5월 2일부터 7일까지 대통령후보자나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30명·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사법부를 온갖 법률로 압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속칭 이재명 방탄 4법이라는 그 4개 법안을 대법원 선고 다음 날부터 바로 발의한 것을 보면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만약 선고 결과가 안 좋으면 법원을 겁박하고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이나 선고 절차나 일정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나니까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아서 대법원을 압박하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도 부끄러웠는지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던 재판 일정이나 절차로 생트집을 잡아서 사법부를 겁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겁을 주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하고 사법 남용이라면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법원장 등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다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내일 또 대법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과 무력화 시도에 법원도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5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는 결정을 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길들이려 했습니다.

5월 12일에는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 재판부도 20일로 지정되었던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재판을 정지했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이후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사법부 파괴와 장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민주당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0명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현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발의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해 오던 사법부에 대한 겁박까지 더해져 사법부가 겁을 먹었는지 정지되지 않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도 7월 22일까지 법원이 모두 기일 변경, 추후 지정으로 재판을 정지했습니다.

헌법 84조의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임에도 재판부 스스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았습니다.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으로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정지하였는데 얼마든지 재판부가 재개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최종적인 상급 사법부의 판단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사회통합과 분란을 해소할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곧장 야당 말살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특검 정국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8월 27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하니까 이때부터는 아예 사법부를 국회와 정부 발아래에 두려는 인식을 내보이면서 대법원장도 쫓아내고 대법관도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하고 특검 사건 재판부도 마음대로 구성하려는, 말 그대로 사법부 장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중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기각 사유가 모두 적시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이것은 구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판단이지요.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같은 날 사법부를 장악하고 압박하기 위한 5대 사법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평가제도, 외부 인사평가 도입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라는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박찬대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대표발의해서 2개월 동안이나 잠자고 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1소위에 회부하고 거기다가 9월 18일에는 3개 특검 사건을 모두 담당할 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을 발의해서 함께 1소위에 회부했고 입맛에 맞는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말 그대로 사법부 장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지요.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 하던데 그게 왜 위헌이냐'라면서 대통령부터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할 발언이었습니다.

9월 14일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원장이라면 사법부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자리임에도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법사위원장이 앞으로 다 고발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안이?

9월 15일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까지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개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의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니까 언론이 브리핑을 오해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속기록을 삭제하는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최고의 정점은 9월 17일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라시급도 안 되는 저급한 가짜뉴스에 부화뇌동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식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최고조로 압박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 저급한 유튜버 내용에 놀아나는 것이 드러났으면 국민들과 대법원장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오히려 서로 자기들끼리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사과는 고사하고 그 음모론을 근거로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정말 후안무치의 끝판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4인 회동설 또는 대선 개입 의혹 이런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죄 만들려는 조작·선동일 뿐입니다.

이처럼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당시 후보나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가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속한 선고를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선고를 하니까 온갖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와 선고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생떼를 쓰고 입법과 행정권력으로 사법부를 겁주고, 겁을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법개혁을 한답시고 사법부를 아예 구조조정해서 자기 편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부와 여당이 할 일입니까? 일반 국민들이 법원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욕을 하고 생떼를 쓰면 나라에서 그냥 둡니까? 대통령이나 다수 여당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을 겁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법원을 통째로 구조조정하겠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법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모든 국민과 기관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헌법이고 그것이 안 지켜지면 처벌받고 퇴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이 사실이고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겠습니까? 그냥 파기자판을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민주당 주장이 조작된 선동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과 재판부에 대해 제2, 제3의 내란이라는 식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겁박을 하고 대통령후보자나 당선자에 대한 재판정지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법, 법원을 길들이기 위한 대법관 30명·100명 증원법,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4심제 도입법, 이런 법들을 발의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 고발하겠다, 탄핵하겠다, 특검법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법원을 겁박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겁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재판부가 모두 기일 추정 방식으로 재판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일 추정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이므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재개해서 헌법 규정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내림으로써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법치주의 실현을 통한 헌정 질서 수호, 입법과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삼권 장악, 야당 말살, 장기 일당독재 체제 완성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전 정부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을 발의한 목적,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

리하기 전에 국회의 위증죄 그 자체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증죄가 존재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법원과 국회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피고인, 즉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를 아무리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그 거짓말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헌법 원칙이고 이 원칙은 전 세계에서 근대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백강요금지 원칙이지요. 그리고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 본인이나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에서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권리,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즉 피고인이 아닌 제삼자가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그런 허위 증언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증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교사한 것도 원래 위증의 공범이 되는 것이 구조상 맞지만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위증을 교사한 것이니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위증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국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본인의 형사처벌이나 범죄 수사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어떤 특정한 사안 내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이 향후에 이 부분이 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또는 나에 대한 재판이 관련돼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현명한 증인이나 참고인이라면 향후 본인에 대한 수사나 형사소추의 위험성이 있어서 나는 증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만약에 국회에서 말을 한다면 그것으로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질타, 엄청난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 과정 중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건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이건 항상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검사가 신문을 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증인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증인이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무슨 특위 불러 놓고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증인·참고인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법정에서와 같은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됩니까? 또는 증인·참고인에게 향후에 수사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아도 좋다, 누가 친절하게 알려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며 침묵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위증죄가 규정되어 있던 재판에서의 위증을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구조가 안 맞는 거지요.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 조항도 없어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법정형이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국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향후에라도 자기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재판에 대한 부담, 고발 이후의 처벌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고스란히 그 증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증인이 국회에 안 나오는 것이 속 편하겠지요.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고 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넓혀 놓고 국회에서 부르면 나와서 증언을 하라? 저는 여기에 응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비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위증교사 문제는…… 위증죄와 위증교사 문제, 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과거에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당시에 성남시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형법에서의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 본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참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위증을 교사한 그 교사로만 기소가 됐겠지요, 위증의 공범이 아니고.

슬라이드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피스메이커(peacemaker)가 되시라. 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겠다', 그 말을 참 잘 만들었다고, 그것이 미국 방문의 최대 성과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페이크 메이커(fake maker)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23년 전부터 왜 검사 사칭 사건에 얽혔느냐 그리고 이것이 23년이나 계속 반복해 가지고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고 또 다른 위증교사가 나오고 그렇게 페이크를 페이크로 덮는 그런 것이 23년 동안 이어져 옵니다.

신문 기사 한번 보시지요.

2002년 7월 3일 수요일 신문입니다. 당시 월드컵이 있었지요, 한일 월드컵. '월드컵이 배낭여행 유행 바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저때 시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특이한 기사가 하나 실려요. '이재명 변호사 구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 2002년도면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지요. 그러니까 현직 변호사가 사실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변호사가 각종 비위로

구속이 돼도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현직 변호사가 구속이 되는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 신문에 '이재명 변호사 구속' 해 가지고 '백궁지구 관련 검사 사칭 공모', 그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한 혐의로 분당 백궁·정자지구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대위 집행위원장—아이고, 무슨 호칭도 깁니다—이재명 변호사를—당시 서른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10일 모 방송국 최 모 피디—이미 구속이 됐어요—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당시 최 피디 옆에서 용도변경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녹음기를 통해 대화 내용을 청취하면서 최 피디에게 질문 내용을 알려 주는 등 공무원 자격 사칭을 공모한 혐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사를 사칭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현직 변호사를 구속하는 경우는 그 당시에도 거의 없던 일입니다. 2002년도면 저도 검사 생활을 할 때인데 검사를 좀 사칭했다 해 가지고 현역 변호사를 구속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왜 구속을 했냐 하면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저렇게 사칭을 해 놓고 방송국 피디는 구속됐는데 본인은 도망을 다닙니다. 본인은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불심검문에 걸립니다, 불심검문에. 그러니까 아마 지명수배가 돼 있었겠지요. 출석하라 했는데 안 나오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니까 지명수배를 걸어 놨는데 아마 불심검문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동생의 인적 사항을 댑니다, 동생. 또 페이크를 쓴 거지요. 동생의 인적 사항을 대 가지고 그때 체포가 안 돼요. 나중에 이것 확인을 해 보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동생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체포를 모면했던 이 부분이 있으니까 현직 변호사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는 분명하니까 저렇게 구속을 시킨 거지요.

이에 대해서…… 저게 23년 전의 일입니다. 23년 전의 일인데 이게 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면서 위증교사로 다시 저렇게 또 탄생을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내용으로 2024년 11월 25일 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지금 검찰항고를 해 가지고 2심이 진행되다가 2025년 대선후보 등록한 다음에 재판이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이 내용이 바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 씨한테 자기한테 유리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였지요—에게 유리한 위증을 교사한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김진성 씨하고 당시 이재명 후보 간에 통화한 내용이 막 언론에 나고 했던 것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녹취 내용이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진성 씨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 즉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김진성 씨한테 했던 증언의 요청 방식이 사건 내용과 설명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 등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변론요지서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렇게 이렇게 증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김진성 씨한테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증언 나가기 전에.

그 녹음 내용에도 나오지요. 이것이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1심 법원의 판단이 이겁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했고 또 검사로서도 상당한 기간 오래 일을 했지만 증인한테 연락해 가지고, 연락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지요. 연락해 가지고 '증언을 해 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증언 해 주면 될지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보내 줘 가지고 '이걸 참고해서 증언해 달라', 이보다 더 명백한 위증교사 행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교사니까 죄를 저질러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허위사실을 좀 증언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위증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사범을 처벌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런 허위사실을 피고인이 교사를 했다 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 흔적을 안 남기려고 대포폰도 쓰거나 제삼자를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연락을 취하는 거지요. 그렇게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돼 가지고 위증교사로 처벌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이 사건처럼 이렇게 명백한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무죄로 1심에서 선고하고 지금은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도 지금 재판이 정지 중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라도 재판 재개해서 빨리 무죄를 확정해 달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났는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1심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를 해 줬어요. 그러면 재판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지요, 나는 떳떳하니까 항소심 빨리 진행해 달라, 무죄 선고 확정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주장 한 적 있습니까?

(「윤석열 재판이나 받으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겁니다. 페이크 메이커인 거예요, 페이크 메이커. 페이크를 페이크로 덮는, 2002년부터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그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부를 상대로 '너희들은 나의 권력서열 밑이야. 내 말 들어' 하고 있는 거지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위증죄의 고발을 특위가 종료된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종료된 다음에 법사위원장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정당에서 맡아서 서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왔던 것이 국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원장,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도 내가 하고 법사위원장도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특검과 탄핵, 정부 흔들기를 했었지요.

그 법사위원장 지금 당대표가 됐어요. 그다음에 온 법사위원장, 본회의장 안에서 주식창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탈당하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온 법사위원장, 다시 그렇게 해서 한번 떠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법사위원장에게 또 국회 내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권을 주겠다, 참 어디까지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끝이 없는 입법권의 전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곽규택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쓸데없는 소리가 끼어들어 와 가지고 이걸 내가 못 했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검사 사칭 그리고 체포되려고 하니까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그렇게 모면하고 또 위증교사는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것은 사실 아무리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닐까요?

그런데 2023년 2월경입니다, 2023년 2월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아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자서전을 냈어요. 거기 자서전에 자신 있게 이렇게 써 놨습니다, '동생 인적사항 대고 폰 배터리 제거', 이재명 자서전에 쓴 과거 도주.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뭐 본인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위증을 한다는 건지 검사 사칭한다는 건지.

이때 2023년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지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도주 전력이 19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변호사 시절 고소 사건에 연루된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몇 달간 전국으로 도주했는데 그 과정이 변호사 출신답게 치밀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폭로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사실을 고백한 적 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해 현직 성남시장을 취재한 KBS '추적 60분' 피디와 공모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만약 피디가 고소 내용대로 내가 시켜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해 버리면 나는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로 향했다'고 썼다.

지명수배 신분이던 이 대표는 '원주 치악산으로 가던 중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다'며 '나는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 둔 대로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검문이 까다롭지 않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그 길로 평창에 도착해 연락해야 할 곳에 모두 연락을 한 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설악산 쪽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한 것은 그래야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는 '나는 강원도 지역을 돌다가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져 오는 것 같아 다시 서울로 향했다'며 '여관을 전전하다가 결국 성남검찰청을 찾아가 자수했다. 그때는 이미 피디도 벌금을 물고 나온 상태였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도망 다니다가 먼저 구속된 피디가 벌금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자수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2년 뒤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도주하게 된다.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발의를 위해 성남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 대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

자 서명운동 회원들과 함께 시의회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기가 파손돼 이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한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주민교회 건물 지하로 몰래 피신했다'며 '경찰에 붙잡히면 곧바로 구속될 처지였다'고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굉장히 심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민교회는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처럼 경찰이 함부로 들어와 체포할 수 없는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두 번째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했었다.

이를 계기로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 대표는 일단 수배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일할 때—그러니까 본인이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인연이 되었던 이땡땡 지청장은 그 무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땡땡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찾아가 나의 불구속을 설득했다. 결국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종결되고 나는 변호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전관예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라고 했다.

그 전에는 도주했잖아요.

이 대표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구속하라고 주장했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썼던 '이재명은 합니다'…… 다 합니다, 다 그냥.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입니다. 본인이 자랑하듯 썼고 그것을 그대로 신문 기사화한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읽는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근거 없는 제보를 근거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 본인이 20여 년간 계속해서 거짓, 위증, 사칭, 페이크를 만들어 내니까 제가 페이크 메이커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야당 말살입니다. 종국에는 민주당 일당독재 체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체제까지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정치 기반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고 이를 통해 이들과의 결속을 다지고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고 불과 4개월의 기간 동안 실패한 실정들과 그로 인해 국민과 국가에 끼친 피해와 파탄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실책과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시선을 야당 말살과 정치개혁, 사법개혁으로 포장해서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중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그들의 실정과 국정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시선을 야당 말살과 사법개혁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셔

야 합니다.

본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원래 이 법안의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었던 소급효, 소급하는 내용까지도 원래는 부칙 2조에 넣어 가지고 발의를 하면서 운영위 또 법사위를 거치면서 그 부분이 소급입법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 실체법이건 절차법이건 처벌을 소급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것은 다 헌법상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런 주장을 다 묵살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표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지금 본회의에 올린 다음에 빼 버리는 일방적인 수정안을 또 낸 겁니다.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위헌인지에 대한 준비와 설명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빼 버렸어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인 표결을 거친 것을 하루 만에 국회본회의에 올리려고 그렇게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런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수정하겠다고 한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과연 그것이 위헌성이 있다, 그것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쳐서 그럴까요?

아까 여당 의원님 한 분께서 이것을 뺐지만, 소급입법을 뺐지만 위헌은 아니다, 그 부분이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부칙에 넣어서 소급입법을 강행하려는 개정안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목적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후에 지금 재판 정지 중입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도 거짓말한 부분이지요, 거짓말한 부분. 그중에서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골프를 쳤느냐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도 있습니다마는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왜 해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가 알아서 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내가 그것을 못 이겨서 용도 변경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도 허위사실이다 해 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지요.

그런데 그 말을 언제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과거의 백현동 용도 변경 부분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지요, 2021년 10월 20일. 불과 4년 전입니다, 불과 4년 전.

그러면 이 부분이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도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했다면 아마 그 부분도 기소가 됐을 겁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도 없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정감사가 종료가 됐지요. 종료가 됐으니까 고발을 못 하는 겁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돼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2021년 10월 20일 날 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으니까 그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2031년 10월 정도가 되겠지요. 2030년까지 임기지요. 임기 끝나고 만약에 국회에서 당시 국정감사에 나와서 위증했으니까 소급입법으로 고발하고 처벌하겠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마 누군가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점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소급입법하는 법안은 만

들어 놨는데, 부칙은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소급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안 뒀던 거지요.

그러니까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그 위증,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위증죄로도 처벌받겠네. 그런데 그건 벌금형도 없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구나. 대통령 끝난 다음에 이것 국회에서 고발하면 또 처벌받겠네. 그러면 아예 소급입법을 빼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 소급입법에 관한 부분, 소급효에 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 실제 통과, 시행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보복의 제도화, 이로 인한 끝없는 대립, 사회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 될 점은 정치적 보복이 제도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회에서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전임 권력에 대한 정치보복은 반복될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정치탄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려는 시도 같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걸림돌이 되는 야당 인사나 전 정권 관계자를 표적 고발을 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정치적 의혹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국에서 불씨만 던지면 언제든지 거대한 정치적 화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자신들의 과거가 또다시 소급 적용의 칼날 아래에 놓일 것을 알기 때문에 현 정권은 더욱 강도 높은 정치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이 보복정치의 악순환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보복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분열과 반목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외면한 채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고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께서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무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사회적 신뢰는 바닥까지 소진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적 에너지는 소모적인 정쟁에 낭비될 것이고 경제, 안보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민생은 더욱 파탄나고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의정활동 위축과 책임 있는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토론과 심의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증인이나 전문가들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신껏 발언하고 진실을 증언할 자유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원회 활동 중에 불완전하거나 때로는 실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언까지도 위증으로 몰려 고발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드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감은 증인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일상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될 줄 모르고 소신껏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말라는 태도가 만연해지고 핵심을 비켜나거나 책임 회피적인 답변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나아가 아예 중요한 국정감사나 청문회의 증인 출석 자체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제기해야 할 의혹 혹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추궁이 혹여나 미래의 자신에게 위증교사 또는 허위 감정 유도와 같은 프레임으로 돌아올까 두려워서 의정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국 국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 감시와 진실규명 기능은 형해화될 것이며 토론과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국회가 아니라 눈치 보는 국회, 침묵하는 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며 국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방통행과 정치보복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보복하고 반목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런 정치 행태와 정치보복의 칼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 수백만 명의 인재들이 반혁명 분자로 내몰려 숙청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숙청을 주도했던 세력은 권력 다툼 속에서 똑같이 숙청당하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은 동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화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전 정권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공무원, 교사, 기자까지 철저히 직장에서 내몰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유럽 사회는 역사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보복의 악순환에 빠졌고 그 칼을 휘둘렀던 세력은 결국 퇴출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도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명예는 빼앗을 수 없다고 저항하던 제1야당은 추방되고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독재 또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추방당했던 정치인들이 돌아오고 나치 부역자에게는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보복과 반목은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역사는 거듭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가 기본 요소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누르는 체제가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국은 타협과 합의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합의 대신 표결 처리, 설득 대신 압박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표결 독재, 여론 몰이에 기대어 반대세력을 매도하는 언어폭력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장 안에서는 합성사진, 풍자 만화, 은밀한 녹취록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용되고 상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성과로 포장되고 여기에 환호와 박수가 이어집니다. 야당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내란 세력부터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역사는 한목소리로 경고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삼권을 장악한 권력이 독재로 흐르지 않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십 번의 탄핵 시도, 사법부 권위 흔들기, 날치기 법안 남발, 비판 세력을 가짜뉴스·극우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행태, 이 모든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치부로 남을 것입니다.

본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과 보복을 위한 입법,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를 들춰내어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시고 본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끝나셨어요?

곽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전진숙)

(19시42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전진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의원 사랑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는 정지 상태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12·3 위헌·위법한 쿠데타로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살릴 법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범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국정을 발목 잡고 국회를 계속해서 인질 삼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그리고 국회법과 오늘 증감법까지 이 법안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법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을 죽이는 법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실 겁니까?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정쟁을 벗 삼아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 대신 책임 있는 입법과 실천을 선택하십시오.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 한말씀 더 드립니다.

지난 2020년 이후 국민의힘은 총 21건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할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그것인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국민은 요청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내수 살리기라고 참으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민생쿠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민생쿠폰 때문에 동네 골목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그렇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기 하더니 특검법이 시행되어서 진실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호영 국회부의장께도 촉구합니다. 작년 7월 4일 필리버스터에서 꾸벅꾸벅 조신 이후에 자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단으로서 역할을 못 하시겠다면 부의장직을 사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4박 5일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학영 부의장님, 연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절을 잘못 만난 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필버가 끝날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증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위법한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증감법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그리고 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128조 및 제129조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증인·감정인 등에 관한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행하는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증인·참고인의 출석 의무, 증언 및 서류 등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으나 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옴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에서 증감법을 반대하는 그 요지에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법 개정안에 관련된 국민의힘의 반대 요지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 남용과 사후 보복 우려 지적입니다.

어젯밤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께서는 국회의장 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안 제15조제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 공수처, 경찰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보고, 이송보고 등은 수사 개입이며 삼권분립 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다수당이 지난 사건과 인사를 겨냥하여 사후 보복용으로 증감법을 활용하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 취지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입법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증감법 위반 고발이 128건이나 있었으나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24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중 10명과 2025년 1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증인 22명에 대하여 증감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 32명 중에서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것은 겨우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증감법에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감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오늘의 모습, 현재의 모습에 국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에 와서 진술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 단호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9월 5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때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분실하는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증감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위증죄의 고발 공백을 메우고 정의를 실천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바로 세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증감법의 입법 취지가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둘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증감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로 한정하였던 것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장하자는 것이 개정 조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체계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선행된 후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감법 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절차법적 문제입니다. 이는 미래의 수사 시스템이 어떻게 분리되든 간에 국회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본 원칙과 직결되며 현행 기관에 대한 즉각

적인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제도 개편과 검찰청 구조개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실제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는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정된 증감법을 먼저 시행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새로운 수사체계에 맞게 법 문구를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법의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개정의 목적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현행 수사체계에서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역할이 막중해졌으므로 이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간보고, 이송보고 등은 수사 개입이며 삼권분립 침해라는 반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고발한 기관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개입을 하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보고와 이송보고는 지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고발 이후 수사를 진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 공수처 등 해당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국회는 고발 이후 수사 절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개정안 역시 이러한 수사기관들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삼권분립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고발권은 견제와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반대 이유를 들 때 보고와 지휘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 대한 수사 보고 의무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국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수사지휘가 아닙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국회의 고발 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 지연이나 부당한 처리가 없는지 감시하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국회에 대한 수사 보고 의무는 수사기관의 처리 결과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헌법 제61조에 따른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증감법상 보고 의무는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후속조치 감시에 해당하고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기능의 합헌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도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사례는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개시 결정 등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권력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는 현대 법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위증, 감정 등에 관한 범죄는 국가 사법 기능 및 국회 활동의 진실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임을 알리고 국회가 고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점검하는 것은 공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혹시 부의장님, 몇 시에 종료됩니까?

○부의장 이학영 19분, 20분.

○전진숙 의원 8시 20분이요?

앞에서 증감법에 반대토론을 했던 곽규택 의원이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좀 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차마 입으로 뱉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협상을 참 잘하고 오셨다', 국민들은 '국격이 다시 높아졌다', 대한민국이 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무한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페이크 메이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눈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볼 것이고 대한민국이 낳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막말을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12월 3일 난데없는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들어 낸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이뤄 내는 일이 벌써, 100일이 막 지난 이 정부가 가진 성과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깎아내리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못한 것은 다시 고쳐서 함께하자고 하는 게 저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벌써부터 정부 초반에 초를 치고 있는 국민의힘, 그러니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 대선에서도 대패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여기 나와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현명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올바른 보수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국민의힘에게 철퇴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이 100%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그 자세를 보고 더욱더 잘하라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곽규택 의원이 이룬 것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페이크 메이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새 정부 10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모두 다 뒤로 했습니다. 민생법안을 올리면 모든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우격다짐으로 급한 민생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국회에서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던 것만큼 정부는 12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했습니다. 2조 7000억 원의 건설 경기 활성화 예산을 만들어 내고 1조 2000억 원의 신산업 투자 촉진 자금을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밖에서 대집회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투자 촉진 자금, 민생 쿠폰이 국내 소비와 생산, 투자 모두에 회복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소매 판매는 0.0%에서 0.7%로 2.5%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5.5%에서 -4.3%로 그리고 드디어 +7.9%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이 0.3% 증가하는 등 트리플 회복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이후에 30억 원 이하 규모의 동네 상권 매출이 18%로 증가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임대라고 써져 있던 골목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거두고 있는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매 하는 일마다 뗑깡을 부리고 어깃장을 부리는 국민의힘, 반성하십시오.

국가경제의 회복은 금융시장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외환보유액이 446억 달러 감소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3개월 만에 117억 달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감소분의 26%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시장은 더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지수는 계엄 사태 당시 2361p까지 추락했으나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9월 11일에는 3344p로 마감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9월 22일에는 반도체 강세를 중심으로 지수가 장중 3482.25p까지 치솟으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음 날에는 3486.19p로 마감하면서 3500선 돌파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시는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경기 회복 정책, 외국인 순매수 유입,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 확대는 결국 국민 경제와 서민 가계의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넘어서서 더 튼튼하고 공정하고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국민적 꿈을 현실로 앞당길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민생 법안이 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대한민국의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복지,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박 5일 동안 이렇게 필버를 하면서 그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의료 분야에서도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 보건, 고용, 금융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컸던 간병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기 시작했

습니다. 돌봄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고 그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재명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300~400만 원 들었던 간병비가 이제 60~70만 원 정도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간병 살인, 간병 파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과거 역사로 흘러들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폭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가족이 감당했던 간병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돌봄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가족이 직장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 악순환을 끊어 냈습니다. 국민은 이제 병원과 돌봄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국가가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는 깊은 신뢰와 위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민생 개선,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이 국민의 생활을 실제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새 정부의 국정수행 긍정률이 꾸준히 6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에 의해서 끊임없이 협박받고 검찰이 만들어 놓은 덫에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굳건히 버텨 내고 하나하나 밝혀내고 국민이 함께한 덕분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이 이재명을 선택했듯이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했던 윤석열을 용서하지 않고 단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3특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증감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가 어떤 이유로 해서 간에 이것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감법을 반대하면서 국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새로 개정되는 증감법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증감법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한다.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가 그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 결과를 보고하고,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중간에 보고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수사기관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려는 것은 현행 증감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 한정하여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다수가 고발을 원함에도 위원장이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도 당연히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현행 증감법 제15조는 위증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고 이를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17일 전원합의체에서 국정농단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 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기간이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였고 2017년 1월 2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의결된 이후에 활동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7년 2월 18일에 특별위원회 위원 18명 중 13명의 연서에 의하여 최순실 등의 주치의 이 모 씨를 위증으로 고발했는데 결국 법원은 특위 활동 기간 종료 후 위증 고발은 위법이라고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합당하고 아울러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 결과보고,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이 냈던 안에 있어서, 수정안에 대한 것을 비판을 하더군요.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습니다. 변하지 않고 주장했던 것만 계속 주장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시대적 흐름도 반영하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그대로 주장하는 그런 국민의힘과는 다른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고집하고, 물론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늘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폄하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민주당은 질적으로 다른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증감법에 관련돼서 다수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수정안을 내놨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중간보고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일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현행 증감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해 국회가 고발할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국회의 실효성이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장 우원식 전진숙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주장으로 오직 발목 잡기, 시간 끌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제쳐 놓고 책임도 없이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반복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으실 겁니다. 지나친 토론 남용이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경고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지 정쟁의 도구, 국정 발목 잡기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긴 연설도 그리고 말싸움도 아닙니다. 바로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을 향한 행동과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직 민생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나오셔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쓴소리도 들으시고 단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쓴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말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됩니

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용지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기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20시22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손명수 의원, 이건태 의원, 임미애 의원, 정을호 의원, 조계원 의원, 정춘생 의원, 손솔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시23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20시3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2표 중 가 18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7)

(20시45분)

○의장 우원식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에 문진석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고발을 회피하거나 고발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서 활동기한 종료 위원회 고발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허영 의원 외 165인과 문진석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진석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문진석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다른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370)

(20시48분)

○의장 우원식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문진석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개혁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9월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야 의원님 모두 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5)

(20시51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2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박지혜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장대리 박지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박지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소희 의원, 이소영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배출권의 할당을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무상할당비율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로 정의하며,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며, 최근 톤당 1만 원에 불과한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하며, 배출권의 시세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가량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감축 수단이지만 그간 그 역할이 유명무실했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시한을 불과 5년 앞둔 이 시점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을 맞아 꼭 필요한 개정 사항을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법안은 매우 의미가 있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입법권을 갖는 기후특위가 만들어져서 첫 번째 제출한 법안이어서 특별히 의미가 있고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대한민국의 기후위기를 국회가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특위 위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월29일 20시5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260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260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문신사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박주민 의원 외 32인 발의)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성국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7인)

고동진 김대식 김민전 박상웅 배현진 유상범 유영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3인)

강대식 강득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욱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진선미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5인)

강경숙 백선희 서왕진 손 솔 차규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문진석 의원 외 165인 발의)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천하람

기권 의원(3인)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김승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민형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6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반대 의원(1인)

이주영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허영 의원 외 165인 발의)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문진석 의원 외 30인 발의)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진성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추가상정(12항)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7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출석 의원(29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58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17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청가 의원(3인)

김민석 유용원 최수진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환경부장관 김성환

○출석 정부위원

행정안전부
차관(장관직무대리) 김민재
보건복지부
제1차관(장관직무대리) 이스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행정안전	이연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5. 9. 25.
국토교통	한병도	이연희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김종양	최형두	국민의힘	2025. 9. 25.

○의안 제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7)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2025. 9. 18.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이상 4건 9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9)

이상 2건 9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1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이상 3건 9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4)

9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0)
이상 3건 9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9)
이상 4건 9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5)
속기사법안
(2025. 9. 18.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0)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2025. 9. 18.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5)
이상 5건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3)
이상 5건 9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9. 1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5)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3)
이상 2건 9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이상 2건 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1)
이상 4건 9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3)
9월 1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2)
9월 19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5)
9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8)

소비자집단소송법안
(2025. 9. 19.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5)
이상 3건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1)
9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이상 5건 9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8)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6)

9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5)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9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2)

9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0)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9. 1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7)
이상 10건 9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9)
9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7)
9월 22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및 정승윤 전부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
(2025. 9. 22. 김용만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213158)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2025. 9. 22.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6)
이상 2건 9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9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9월 2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2)
이상 3건 9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2)
9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4)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7)
9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3)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 9. 2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9)
이상 4건 9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5)
9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9)
이상 3건 9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7)
이상 2건 9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9. 23.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1)
이상 6건 9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4)
이상 4건 9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8)
9월 2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이상 4건 9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2025. 9. 23.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2)
이상 2건 9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3)
9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1)
이상 3건 9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0)
이상 3건 9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2025. 9. 22.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1)
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2025. 9. 22. 이성윤 의원 등 22인 요구)(의안번호 221316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31)
이상 2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2025. 9. 22.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3)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5. 9. 22.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 9. 22.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6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 9. 23.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91)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위원회안)
(2025. 9. 23.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19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 9. 24.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0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25. 9. 24.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25. 9. 24.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9)
국회기록원법안(위원회안)
(2025. 9. 24.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025. 9. 24.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5. 9. 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 9. 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 9. 24. 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 9. 2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 9. 24.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2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3)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6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6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 9. 24. 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2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2025. 9. 24.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9. 24.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5)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2025. 9. 25. 문진석 의원·신장식 의원 등 178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79)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2025. 9. 25. 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0)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2025. 9. 25. 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1)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2025. 9. 25. 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28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25. 9. 29. 문진석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3370)

○의안 심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6.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7. 28.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7.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8.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5.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이상 2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5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문신사법안

(2024. 10. 31.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2024. 11. 26.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2025. 1. 1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7.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5)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15.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1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21.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98)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6. 5.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0)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장 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0)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기후위기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0)

9월 18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정에 관한 청원

(2025. 9. 24. 홍혁기 외 1인으로부터 이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4)

9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추천의뢰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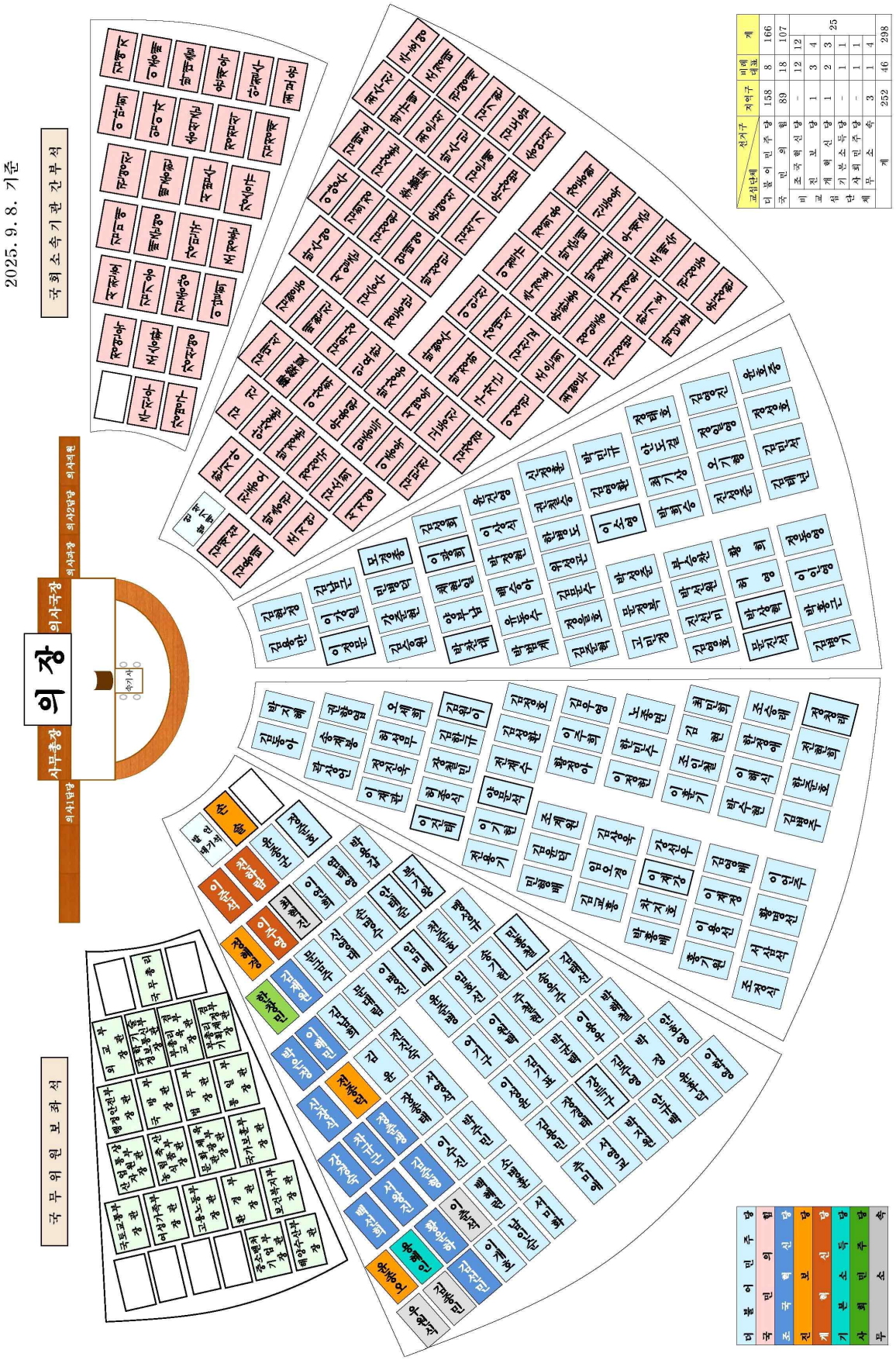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5. 9. 18. 국무총리 제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5. 9. 23. 대통령 제출)

○본회의장 의석표


2025. 9. 8. 기준
국회소속기관 간부석
국무위원 보좌석
의 장
사무총장
의사국장
의사과장
의사담당
의사전문위원
속기사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계
지역구
비례대표
25
252
46
298